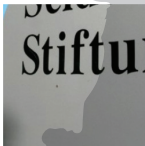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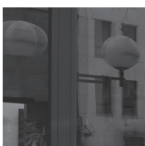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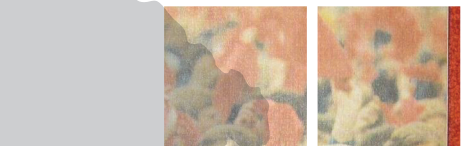


# 16

독일통일 총서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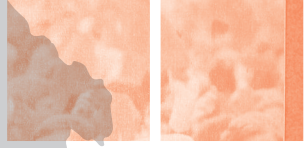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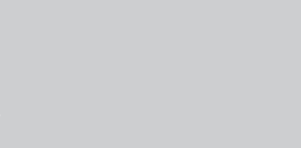
# 16

독일통일 총서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Bürgerkunde  
7



독일통일 총서 16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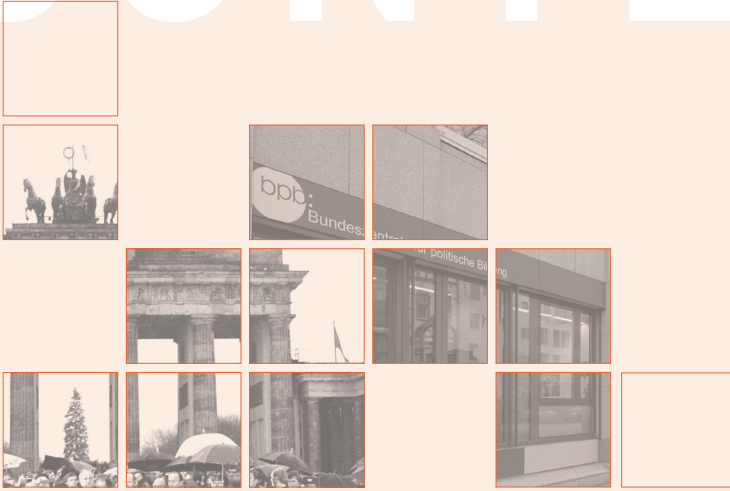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 CONTENTS



## 독일의 통일교육과 정책적 시사점

<b>제1장 서론</b>	<b>10</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b>제2장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개관</b>	<b>13</b>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14
1.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	14
2.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33
3.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비교	48
제2절 독일통합과 통일 후 정치교육	52
1. 학교정치교육 분야 통합	53
2. 사회정치교육 분야 통합	59
3. 통일 후 독일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67
<b>제3장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 상황</b>	<b>81</b>
제1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81
1. 정치교육 관련 연구	81
2. 통일교육 관련 연구	84
제2절 향후 연구과제	87

<b>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	<b>89</b>
제1절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	89
제2절 독일이 주는 시사점	91
1. 통일을 보는 관점	91
2. 통일 이전부터 준비할 사항	94
3. 통일 이후 강조할 사항	102



## 정책문서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

들어가며	120
<b>제1장 민주시민교육의 정착</b>	<b>122</b>
제1절 서독의 민주시민교육과 동독의 국가시민교육	122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전통	123
2. 서독의 민주시민교육	125
3. ‘국가시민교육’ 수업의 개혁을 둘러싼 동독정부 내의 논의	129
제2절 통일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132
<b>제2장 직업교육 - 계속교육/재교육</b>	<b>141</b>
나가며	147

# CONTENTS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52

문서 요약 162

문서 요약(문서번호 1~60) 16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 표 목차

표 1-1) 서독의 주요 사회정치교육기관 28

표 1-2)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45

표 1-3) 통일 전 동서독 학교정치(사상)교육 비교 50

표 1-4) 통일 전 동서독 사회정치(사상)교육 비교 52

표 1-5)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57

표 1-6)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 주요 사업(1990-1999년) 66

표 1-7) 동서독주민의 정당 지지율 80

표 1-8) 통일문제의 정치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 93

표 1-9) 사회통합 관련 한국과 독일 비교 97

표 1-10) 주요 사회지표 98

표 1-1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02

표 2-1) 통일 전 서독 민주시민교육 현황 129

표 2-2) 통일된 독일의 정치재단 139







# 독일의 통일교육과 정책적 시사점

김 창 환 (한국교육개발원)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독일과 한국은 유사점이 많은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이 되었고, 냉전체제 속에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였고, 교육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공통점이 있다. 분단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을 준비한 점도 유사하다. 그러다가 1990년 운이 좋게 독일이 먼저 통일되었다.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올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북한이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 놓이면서 최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우리는 먼저 참고할 만한 선행 사례들을 찾게 된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상호대결과 이념갈등을 겪었고,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후 각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시도하여, 1990년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독일은 통일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으나, 통일이 민족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통일을 준비하

는 교육을 실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진행과정과 통일준비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무조건 수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통일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먼저 통일을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가 취할 점과 버릴 점, 생각해야 할 점, 올바른 통일교육의 모습 등을 찾을 수 있다.

통일 전 서독은 통일교육을 통하여 서독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지를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평화적인 갈등해결 능력과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통일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통일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과 통일 후 독일의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고 올바른 통일교육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일 이후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우리의 통일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통일 전후 독일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통일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 및 통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 전 서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정책, 통일교육기본지침, 통일교육의 목적



등을 중심으로 서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통일 전 동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정책, 통일교육의 목적 등을 중심으로 동독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어서 통일 이후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어떻게 통합되고 변화하였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구분하여 국내 연구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통일 전후 독일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독일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분야의 독일 주요 문헌과 정부 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개관

통일 전 독일에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서독) 또는 정치사상교육(동독)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졌다.

서독에서 정치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 안에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독일문제(Deutsche Frage)에 대한 교육’으로 불리어졌다. ‘독일문제’라는 이름으로 동독에 대한 지식을 매개하고, 동서독을 비교하고, 독일 주변의 국제정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또한 냉전체제 하에서 동서유럽 간의 긴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독일통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동서독 문제를 일부 다루었다. 즉, 서독에서 통일교육은 정치교육, 사회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틀 안에서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이 행해졌다. 정치사상교육은 서독의 정치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



의 이념을 교화시키는 교육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가르쳐 그러한 이념으로 무장된 사회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의 주 관심사였다.

이 장에서는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동독의 정치사상교육을 살펴보고 도록 하겠다. 정치교육을 고찰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 1.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

통일 전 서독에서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크게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정치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정치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정치교육은 주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내독성 산하 ‘전독(全獨)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은 전 국민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독 및 동구권을 포함한 국제 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국가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 1) 통일 전 서독의 학교정치교육

##### (1) 학교정치교육 개요

통일 전 서독에서의 학교정치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Sozialkunde)’, ‘역사(Geschichte)’, ‘지리(Edrkunde)’ 등의

교과에서 정치교육을 다루었다. 통일교육 역시 ‘사회’, ‘역사’, ‘국어’, ‘지리’ 등의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교과는 ‘사회’ 교과였다. ‘사회’ 교과는 주에 따라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교과에서 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

통일 전 서독에서 학교정치교육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9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4학년(13학년)<sup>1</sup>까지 ‘사회’ 교과 안에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11~13학년)의 경우에는 반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회과는 주당 최소 2-3시간에서 최대 5-6시간이 배정되어 가르쳐졌다. ‘사회’ 교과를 위하여 서독의 각 주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침서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지침서 외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치교육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교수학습용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학교정치교육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적 과제는 하루 속히 서독에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전후 독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고,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을 서독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서독의 통일정책 및 동독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의 통일정책과 대동독정책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sup>1</sup> 통일 전 서독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3학년(우리나라는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첫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의 관계단절 단계이다. 1949년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양 국가가 수립되었고, 양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만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서독 문제와 관련된 상대방의 정책 제안들에 대하여 일체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서독정부의 이러한 기본 입장(할슈타인-독트린)은 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서독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동독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입장은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계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의 관계정상화 모색 단계이다. 1962년 쿠바 위기가 평화롭게 극복되고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으로 인한 긴장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동서독의 정치환경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독 외교부장관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는 ‘변화의 정책(Politik der Bewegung)’이란 이름 하에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에 조심스럽게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독의회는 동유럽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만장일치로 표명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한 이후 신동방정책의 대변인이었던 에곤 바(Egon Bahr)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구상을 밝히게 된다. 이러한 구상은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화하게 된다. 빌리 브란트는 1963년 유명한 ‘작은 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베를린 시민들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66년 기독교민주당(보수당)과 사회민주당(진보당)이 거대 연정을 구성하면

<sup>2</sup> M. Glaab(1996).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pp.178-188.

서, 외교부장관을 맡게 된 빌리 브란트는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때부터 동독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되었다. 인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관계정상화가 모색되었다.

셋째 단계는,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관계정상화 및 교류협력 기반 구축 단계이다. 1969년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면서 서독의 동독정책 및 통일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나타났다. 1969년 서독 수상에 취임한 사민당의 브란트(W. Brandt)는 취임연설에서 동방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해에 ‘분할된 독일에서의 민족의 상황’이라는 연두교서에서 “독일 민족은 하나이나, 독일 땅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요지의 ‘1민족 2국가론’을 제기하여,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였다. 1971년 12월 동서독 간에는 ‘민간인과 물자의 서독과 서베를린 간 통과교통에 관한 동·서독정부 간 협정’과 ‘여행 및 방문완화와 개선에 관한 서베를린 시 당국과 동독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서베를린주민의 동독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었다. 이후 브란트는 꾸준히 대동독 접근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70년 2차레에 걸친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동서독 양국 정부는 1972년 서로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였다. ‘기본조약’에 따라 동독은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받았고, 서독은 독일의 단독대표권과 할슈타인 원칙 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여 동서독 간에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서독 관계에서는 비록 타협될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지만,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반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1974년에 브란트의 후임으로 슈미트 수상이 등장한 이후 동독에 대한 실용주의 노선은 더욱 강화되었다. 슈미트 수상은 통일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분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곧 ‘고위정치(high politics)’보다 ‘하위정치



(low politics)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정책을 구사하여 내독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sup>3</sup>. 슈미트 수상은 동독이 서독과의 각종 교류에 협력할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고, 동독의 태도에 따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부각시켰고, 1975년부터 대동독 무상지원을 개시하는 등 동독지원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동·서독 관계가 정상화되자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서독 통일교육의 중점은 동독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독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모아졌다. 서독은 동독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특징, 동독의 경제현황, 생활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고, 서독의 체제, 생활수준, 경제역량을 동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물론 동독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도 객관적으로 교육시켰다. 서독은 상호 적대시하고 비방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어느 체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더 우월한 것인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서독은 정치교육에서 동서독 이데올로기적 갈등대립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평화적 공존에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모색하는 한편, 서구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지도적 국가로서 민주국가의 실현과 유럽의 평화정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단계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이다. 1982년 정권교체와 함께 기독교민주당의 헬무트 콜(H. Kohl) 정부가 탄생하였다. 콜 정부는 교류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보수당인 기민당의 동독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냈고, 국회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콜 정부의 동독정책에서는 양독 국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었고, 동서독국민의 만남과 교류가 강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동독과

<sup>3</sup> 최의철(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p.49.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고, 상호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M. Gorbachew)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1987년에는 동독 공산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E. Honecker)가 서독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협정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3) 통일교육 지침

서독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실시하였던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독일문제(Deutsche Frage)’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부분적으로나마 독일문제와 관련된 주제 영역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13일 KMK(Kultusministerkonferenz, 서독 주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동구권에 대한 이해(Ostkunde)’라는 내용을 학교 수업에서 다룰 것을 결정한 이후이다.<sup>4</sup>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다: “독일의 모든 교육제도는 소련의 지배로 인해 독일국민들이 추방되고 동서독이 분단된 점을 알게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독일과 유럽의 운명은 이러한 과제를 잘 성취하는 데에 달려 있다. 그 해결점은 동구권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은 초·중등 일반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등 모든 교육 분야에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 점이 강조된다. 첫째, 평화와 자유의 원칙 아래 독일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련점령지인 동독에

<sup>4</sup>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p.7.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동구권 체제와 논쟁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구권의 인종, 문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sup>5</sup> KMK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역사교육’과 더불어 ‘정치교육’과 ‘언어교육’을 강조하였다. “정치교육은 첫째, 통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이론과 실제에 있어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동유럽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이 서독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sup>6</sup> 언어교육 역시 동유럽 언어에 대해 그동안 소홀히 한 것을 비판하고 동구권 언어, 특별히 러시아어를 적어도 김나지움에서는 필수 또는 선택어로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학입학시험에서도 동구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sup>7</sup>

1972년 브란트 정부에 의해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통일교육과 관련된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후 독일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하는 교육학적인 또는 정치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1978년 6월 서독국회의 내독관계위원회는 정치교육에 있어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독일의 대통령 발터 쉘(Walter Schell)은 1978년 8월 17일에 행한 연설에서 모든 학교와 교사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들에게 자유 속의 독일통일을 향한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바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임을 강조하였다.<sup>8</sup>

<sup>5</sup> ibid., p.7.

<sup>6</sup> ibid., p.9.

<sup>7</sup> ibid., p.9.

<sup>8</sup> 문용린 외(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44.

뿐만 아니라 1978년 보스만(D. Bossman)은 서독의 각급 학교 학생들(13~24세)을 대상으로 독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생각들을 조사·발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서독의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분단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감정적인 반공 의식과 함께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에의 참여 준비성은 결여된 채, 베를린에 대하여는 강한 감정적 유착심을 갖고 있으며, 동독에 대하여는 서로 상반된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9</sup>. 또한 이보다 먼저 1975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학생의 80%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56%는 1953년 6월 17일의 동독 의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2/3는 베를린 장벽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80%는 베를린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이와 같은 학계의 연구 결과와 정계의 지대한 관심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KMK는 1978년 11월 23일 ‘학교에서의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을 결정해 발표하였다<sup>11</sup>.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침은 통일 이 될 때까지 서독의 각급 학교를 위한 통일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서독 주문교부장관 상설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 지침서는 서독의 모든 주에 적용되었다.

서론에서는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된 배경 및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평화와 자유의 이념 안에서 독일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러

<sup>9</sup> 문용린 외(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44.

<sup>10</sup> 문용린 외(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44.

<sup>11</sup>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3. November 1978,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1979, pp.245-256.

일으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독과 동독주민과 동독의 발전과정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이다.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독일통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무엇보다 학교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독일문제는 모든 학교 수업에서 확고하게 강조되어야 한다.”<sup>12</sup>

제1장에서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독의 기본법, 동서독 기본조약, 서독의회와 서독정부의 입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서독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서독을 넘어서서 독일 전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독 기본법에서는 독일국민들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자주적으로 성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두 독일 국가가 평등의 원칙 아래 국경을 상호 존중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쌓아 갈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독의회는 1972년 5월 10일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의지를 만장일치로 천명하였다.... 서독 연방정부는 1977년 6월 17일 독일이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와 통일이 모든 독일민족의 염원임을 천명하였다....”<sup>13</sup>

제2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서독의 청소년들이 독일의 분단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동일하게 분단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서독주민들 사이에도 분단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다. 독일문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전체 국가사회의 책임 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원칙 아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학교의 과제이다.”<sup>14</sup>

<sup>12</sup> ibid., p.246.

<sup>13</sup> ibid., pp.246-247.

<sup>14</sup> ibid., pp.247-248.

이와 같은 기본 입장 하에 제3장에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2.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3. 독일의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통된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 국적을 갖고 있다.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체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 요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10. 동독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항하려고 한다. 12.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주민들도 독일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14.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다. 15. 독일은 서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sup>15</sup>.

제4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및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에 대한 9가지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 독일문제는 무엇보다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국어(독일어)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학생들은 독일국가의 멜로디를 알아야 하며, 3절을 암기하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독일이 분단국가임과 베를린이 옛 수도임을 알아야 한다. 4. 역사적인 관점에서 독일민족의 탄생과 독일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5. 일반사회 교과에서는 동독의 지배구조,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상태를 가르쳐야 한다. 6.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서독뿐 아니라, 동독과 독

<sup>15</sup> ibid., pp.248-255.



일제국 당시의 독일 영토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7. 국어 교과에서는 특별히 중등교육에서 독일 민족의 성립과정에서 문예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동독의 문학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 8. 기타 다른 교과에서도, 특별히 미술과 음악 교과에서 독일문제와 동독의 상황에 대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다. 9.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평결은 수업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6</sup>.

제5장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들이 편찬·제작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교사 양성 및 연수과정에서도 이 합의 내용들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각 주의 문교부장관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sup>17</sup>.

통일교육 지침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 Konsens)’이다. 1976년 독일의 정치교육학자들이 남부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서 정치교육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sup>18</sup>.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교육 학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첫째 합의는, ‘교조주입 금지원칙’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학생들의 자주적인 판단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합의는, ‘논쟁성 투명화원칙’이다.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쟁점을 그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합의는,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이다.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sup>16</sup> ibid., pp.255-256.

<sup>17</sup> ibid., p.256.

<sup>18</sup> 전득주·페터마싱·허영식 편(2006).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엠-에드. pp.16-17; Georg Weissenho(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vor 1990,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6-27.

자신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학생에 대한 정치교육의 수업지침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독일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 (4) 통일교육(‘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교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펴기 전과 후에 있어서 통일교육의 방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방정책 이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기 전에 서독 통일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문제(Deutsche Frage)’라는 주제 아래에서 동독을 비롯하여 동구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서독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동독의 비민주적인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동서독 독일민족과 국가가 하나임과 독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면서도 냉전시대를 반영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은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동서독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의 체결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통일문제를 현실화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더불어 동서독국민들이 독일문제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달라진 통일 환경은 통일교육의 목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제시된 1978년의 통일교육 기본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



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방정책 이전에는 동독을 비하하고 서독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범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동방정책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객관적인 동독 이해와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강조한 점, 동독주민을 한 민족으로 보고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강조한 점 등은 분단 후 통일이 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져 온 통일교육의 목적이었다<sup>19</sup>.

## 2)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

### (1) 사회정치교육 개요

사회정치교육은 성장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말한다. 기성세대는 이미 정규 학교교육을 이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정치교육은 성인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통일 전 서독에서 사회정치교육은 학교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이란 차원에서 폭 넓게 이루어졌다. 원래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나치즘(Nazism)을 극복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민주주의 기반이 약한 것이 제1, 2차 세계대전과 나치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서독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952년 내무성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센터(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를 설치하였다. 1963년에는 명칭

<sup>19</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23.

을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로 바꾸고, 1966년 9월에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 시행하였다<sup>20</sup>.

통일 전 서독에서의 사회정치교육은 정치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전독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관련기관인 11개의 주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와 함께 통일교육을 주도해 나갔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이지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었으며, 그 기능상 성인 정치교육기관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다. 11개의 주정치교육센터와는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하고 지원하였다. 전독연구소도 내독성 산하기관으로서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정치교육 재단과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들 역시 사회정치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경제교육, 사회교육, 법교육, 국제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바탕에서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일교육의 주 목적이었다. 주요 통일교육 내용으로는 동독에 대한 이해, 동서독 체제 비교, 동구권과 서유럽의 갈등, 국제정세 등이었다. 교육방법면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주된 방법이었다.

.....  
<sup>20</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97.

## (2) 사회정치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서독에서는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더불어 정당의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등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 규모와 활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관은 연방정치교육센터와 독일 4대 정당의 정치교육 재단, 그리고 내독성(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내독성<sup>21</sup>의 주요 과제는 독일정책을 입안하고, 독일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지만, 통일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내독성의 통일교육은 산하 기관인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와 함께 수행하였다.

표 1-1) 서독의 주요 사회정치교육기관

주요 정치교육 담당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연방정치교육센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센터 바이에른 주정치교육센터 베를린 주정치교육센터 브레멘 주정치교육센터 함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헤센 주정치교육센터 니더작센 주정치교육센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치교육센터 라인란트-팔츠 주정치교육센터 자르란트 주정치교육센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치교육센터
내독성	전독연구소
정당 재단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 콘라드-아데나우어 재단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한스-자이델 재단
사설 정치교육기관	개신교 정치교육기관 카톨릭 정치교육기관 경제단체 정치교육기관 정치 관련 연구소 기타 각종 정치교육 단체

<sup>21</sup> 독일문제와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1949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통일부와 유사한 기관이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서독국민의 정신에 민주적인 사고를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의 산하기관으로 1952년에 발족되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의 목적은 독일국민에게 가능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확고하게 하며,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설치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주제를 정치교육의 핵심 이슈로 다루었다. 1950년대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기능이 핵심 주제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독일 역사에 대한 회고, 특히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학생운동 등 사회적인 변혁이 핵심 관심사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당시 주요 사회적 관심사였던 경제문제, 동방정책, 테러리즘이 핵심 사업이 되었고, 더불어 정치교육 과정과 교수방법의 개발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그리고 사회운동이 핵심 주제가 되었다.

### (3)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했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정치관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치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통일 전 서독 사회정치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sup>22</sup>을 중심으로 통일 전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간행물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간행물 발간 사업이었다. 간행물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과 일반도서로 나눌 수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는 주간신문인 ‘국회(Das Parlament)’, ‘국회’의 부록인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 ‘확대경(Zeitlupe)’,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e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이 있었다.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도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매년 각종 도서들이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고 폭넓게 읽혀졌다.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간되는 도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교육 시리즈 간행물이었다. 편집서, 핸드북 또는 모노그래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시리즈 간행물은 1985년까지 모두 230권이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 일반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지식과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반도서 외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팸플릿으로 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쟁점(Kontrovers)’이라는 팸플릿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주 대상으로 다루었고, 1968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출판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

.....  
<sup>22</sup>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86). Tätigkeitsbericht 1985, Bonn.

여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고등학생과 일반 성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 및 편집되었다.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교과 수업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기획되었다.

### ②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매년 100건이 넘는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정치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연수 프로그램(Fachtagungen)과 동서지역담당지부 세미나 그리고 해외연수로 나누어진다.

### ③ 시청각 매체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시청각 매체를 정치교육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이 주요 매체로 활용되었다.

### ④ 학생 정치교육 경연대회

통일 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치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1970년부터 실시된 경연대회의 참가대상은 독일 전역의 학교에서 6-1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학급, 동아리, 특별활동그룹이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총 50,000개 학급의 1,500,000명의 학생들이 정치교육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연구활동, 인터뷰, 예술활동 등을 매체로 경연대회를 준비하였다. 학급 또는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준비를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작업과 팀정신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 (4) 통일 전 서독 사회정치교육의 효과

서독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사회정치교육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사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19년부터 나치가 집권한 1933년까지 민주주의를 시험할 기간이 있었으나, 국내 정세가 혼란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의 국가적 최대 관심사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치교육은 그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서독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통일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보냈다. 사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면, 서독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국민들은 기꺼이 신속한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독교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통일 이후 통일 후유증이 극대화될 때 서독국민들이 취한 자세와 행동이다. 1992년 동서 간의 심리적 갈등이 극대화되었을 때, 서독지역 국민들은 폭력 등 극단적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민주적인 가치 아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일부 극단론자들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서독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사회에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독일통일을 완성하고 민주적인 통일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독일은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정치교육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서독의 정치교육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 2.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면, 동독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은 한마디로 이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이념교육의 중요 내용이었다. 서독에서는 통일교육 안에서 동서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전달과 통일의식과 의지를 고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동독의 이념교육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제국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전 동독에서는 민족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승리하는 차원에서의 정치사상교육만이 가능하였다.

통일 전 동독에서의 정치사상교육 역시 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학교정치사상교육과 사회정치사상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학교정치사상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정치사상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정치사상교육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교육부가 담당하였고, 사회정치사상교육은 역시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 1) 통일 전 동독의 학교정치사상교육

#### (1) 학교정치사상교육 개요

구동독의 학교정치사상교육은 철저하게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서독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통일 전 동독에서 학교정치사상교육은 교과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교과활동으로는 전담교과인 ‘국가시민(Staatsbürgerkunde)’ 교과가 있었다. 교과 외 활동으로는 군사교육 및 청소년 조직 활동을 통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 ① 국가시민 교과

통일 전 동독은 ‘국가시민’이란 이름의 교과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였다.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었다. ‘국가시민’ 교과는 중학교 1학년(7학년)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12학년) 때까지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시민’ 교과를 위하여 동독정부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다<sup>23</sup>.

7학년 때에는 동독의 역사와 사회적 질서를 배우는 것이 중점 내용이고, 8학년 때에는 동독의 헌법을, 9학년 때에는 사회주의에로의 사회발전의 법칙과 계급투쟁 과정을 배우고, 10학년 때에는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11-12학년 때에는 변증법적 유물사상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 ② 군사교육

국가시민 교과와 더불어 군사교육 역시 정치사상교육의 장으로서 강조되었다. 동독의 모든 국가 구성원은 국가 방위를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했다. 이 점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었다. 군사교육은 그러한 준비를

.....  
<sup>23</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36.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군사교육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교과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예비군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졌다.

군사교육의 과제는 1) 국토방위 동기 부여, 2) 목숨을 걸고 사회주의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 함양, 3) 군사정치적, 사회과학적, 군사적 지식과 능력 매개, 4) 용기, 순종, 희생정신의 함양과, 힘, 인내 등 신체의 단련 등이었다<sup>24</sup>.

군사교육은 이미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군인을 만나고, 군사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국토방위와 평화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는 군대와 군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도록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중급과 상급단계의 학교교육에서는 특별히 ‘역사’와 ‘국가시민’ 교과에서 군사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가능성이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기초적인 군사지식이 전달되었다.

### ③ 청소년 조직 활동

동독은 정치사상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조직을 적극 활용하였다. 청소년 조직으로는 자유독일청년연맹(Freie Deutsche Jugend)과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은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sup>25</sup>과 유사한 조직이다. 8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동독 청소년 조직을 대표하였다. 통일 전 전체의 70%의 학생이

.....  
<sup>24</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39.

<sup>25</sup>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4세부터 3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청년조직으로서 예술활동, 체육활동, 군사훈련, 노동 등을 통하여 학생 및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공산주의적 도덕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직에 가입하였다<sup>26</sup>. 자유독일청년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반제국주의-민주주의 대중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그 기능상 공산당(SED)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목적은 1) 청소년을 사회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가로 교육시키는 것, 2) 청소년들을 동독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 3) 청소년 군대조직의 건설, 4)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확산, 5) 다면적인 여가 선용 조직과 학습활동 장려 등이었다<sup>27</sup>.

자유독일청년연맹에 가입하는 청소년들이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1) 자유독일청년연맹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것, 2) 학습과 노동과 연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것, 3) 군사지식 획득과 노동자-농민 국가 방위태세 확립, 4)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제적 결속력 강화, 5) 공동체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적 규칙을 엄수하는 것, 6) 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조직을 홍보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것 등이었다<sup>28</sup>.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조직은 중앙집권적이었다. 각 지방에는 지회를 두고 있었고, 지회에는 기업체, 행정, 학교, 대학, 공장 등에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속하게 된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최고 상급기관은 국회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휘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자적인 일간지를 발행하고, 각종 잡지를 발행하였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청소년 조직이라면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은 유소년들을 위한 학생 조직이다. 북한의 조선소년단<sup>29</sup>과 유사한 조직

<sup>26</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3.

<sup>27</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0.

<sup>28</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0.

<sup>29</sup> 북한의 유소년 조직으로 만 7세부터 13세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토론회, 연구모임, 노동활동 등을 통하여 '당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용감한 공산주의 전사'를 배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지도를 받으며 1학년에서 7학년의 어린이들이 가입대상이다. 전체 학생의 90%가 이 조직에 가입하였다<sup>30</sup>.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1948년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연합단체로 결성되었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목적은 모든 어린이들을 평화와 사회주의 이념 아래 철저한 동독 국가 시민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었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의 주요 과제는 1) 학교가 사회주의적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는 것, 2)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 흥미있고, 교육적이고, 어린이에 맞는 활동의 개발 등이었다<sup>31</sup>.

자유독일청년연맹과 마찬가지로 에른스트 텔만 연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독자적인 복장과 여러 상징적인 휘장들을 하고 다녔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 조직은 학교 내의 전체 조직과 학급 내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유독일청년연맹이 지원하고 신문과 잡지도 발행하였다.

## (2) 정치사상교육 정책

통일 전 구동독은 한마디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였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어야 하며, ‘혁명적 정치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로서 구실을 하였다<sup>32</sup>. 교육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의 통합’이

<sup>30</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3.

<sup>31</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1.

<sup>32</sup>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p.7.



구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추구하던 핵심 원칙이었다<sup>33</sup>. 이 점은 정치사상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기본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34</sup>. 첫째, 모든 정치사상교육 정책은 공산주의 정당이 만들었고, 교육행정 기관은 단지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그것의 사상적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의 현 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넷째,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기본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sup>35</sup>. 첫째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로서 나치시대의 교육제도를 ‘반제국주의적이고-민주적인 교육제도’로 개혁하던 시기로서, 이때에는 사회주의 학교를 정착시키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기는, 1949년부터 1962년까지로, 사회주의 이념이 모든 교육제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1970년까지로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전 동독의 정치사상교육 기본정책은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를 거쳐 완전 정착되었다. 1949년 이후 정치사상교육은 이념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독일공산당(SED)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독일공산당은 정치사상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육 분야에서 완전한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  
<sup>33</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69.  
<sup>34</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15.  
<sup>35</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17.

독일공산당(SED)은 위와 같은 정치사상교육 기본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원칙들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sup>36</sup>. 첫째, 모든 정치사상교육 정책과 교육적 수단은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이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라는 전제 아래에서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과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사회 변혁의 도구이다. 셋째, 정치-이념 교육, 정당의 영향, 학교, 교육, 생산 역시 상호관련적인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인격의 다면적 형성은 최종의 교육목적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사회주의 도덕,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대한 충성, 노동에 대한 애정,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등이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실성과 우월성, 그리고 이념 논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신념을 소유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여 구동독의 정치사상교육 정책은 독일 전체에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도록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교화시키고 사회주의 인간(sozialistische Persoenlichkeit)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sup>37</sup>. 이러한 정치사상교육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 국가가 건설되고 1989년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구되어 왔다. 서독에서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바뀐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사례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76년 제9차 당 대회에서 구동독 수상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동독의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산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더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 것을 요청한다.”<sup>38</sup>고 강조하였다.

<sup>36</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24.

<sup>37</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1.

<sup>38</sup> S. Baske(Hrsg.),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1979, p.26.



### (3) 정치사상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정치사상교육의 기본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교 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독 당국은 ‘국가시민’ 교과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였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전달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완성해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주의 모국과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9</sup>.

정치사상교육에서 매개되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철학적 지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인류 역사의 진보과정의 법칙적 귀결이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휘 아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결과요, 반인류적인 제국주의체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알게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체 국가시민 교과 수업에서 사회주의 세계가 그 힘과 권력과 권위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어야 했다. 학생들은 사회주의가 역사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것이며,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학생들은 위의 사실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동독과 소련 등 동구권 국가들의 역사적 위치와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야 했다. 더불어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역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 선진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적 정당성과 제국주의에 대

<sup>39</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3.

한 우월성 등을 인식하여야 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승리하고 선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학생들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배워야 했다.

이를 위해 요청되는 것은 세계관교육, 정치교육, 도덕교육이었다. 학생들은 먼저 사회주의의 역사적 필연성과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했다. 학생들은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조국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사상교육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기초 능력이 강조되었다<sup>40</sup>.

-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발전 모습을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적으로 사회발전 현상을 볼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세계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은 물론 독자적인 안목을 형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적대계급의 정책과 이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쟁할 수 있는 능력
-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문헌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관련 문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대중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현재의 정치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사회적 삶의 관련성 속에서 평가하고, 사회적-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sup>40</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44.

#### (4) 정치사상교육 특징

구동독 정치사상교육 과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간적으로 구서독보다 일찍 정치사상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중학교인 7학년부터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직 학생들의 추상적-비판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이전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치사상교육이 획일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정부가 교육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서독과는 달리 중앙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기획하고 모든 학교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7학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단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셋째, 정치사상교육과 관련해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동독사회의 특징, 공산주의 정당, 사회주의 역사관, 동서독체제 비교 등이다. 서독처럼 폭 넓게 정치, 사회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동독체제의 우월성과 상대방 체제의 비난을 선전하고 주입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넷째, 구동독 정치사상교육 과정은 주요 교육내용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교수방법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동독에서 실시된 정치사상교육 교수학습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화(Indoktrination)로서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교사들 역시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다섯째, 구동독의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가치적인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소개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편파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

였다. 동독체제에 대한 내용서술에 있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였던 구 서독과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문제는 나중에 동독지역 학생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고, 학생들이 교육에 불신을 갖게 하고, 통일 후 학생들의 사회 부적응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섯째, 구동독의 정치사상교육 내용은 엄격히 말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객관적 가르침과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과 의지를 심어주는 통일교육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체제옹호교육이었다.

## 2)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 (1) 사회정치사상교육 개요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자질을 매개하는 폭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에서는 일관성 있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교 정치사상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치사상교육에서도 이념교육은 핵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구동독은 모든 국민의 능력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sup>41</sup>이 국가적 과제라는 명목 아래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을 강조하였다. 사회교육에서도 사회주의적 가치관, 인격, 도덕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체 사회가 사회주의화되고, 자본주의-제국주의와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교육개념에서는 이념교육과 사회주의적 의식과 행동의 개발이 사회주의 인격의 핵심 가치로 간주된다.”<sup>42</sup>

통일 전 동독의 교육은 공산당이 그 방향을 결정하였다. 1967년 4월 17

.....  
<sup>41</sup>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p.20.

<sup>42</sup> G. Neuner(1973). Zur Theorie der sozialistischen Allgemeinbildung, Berlin, 35f.



일부 22일까지 개최되었던 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교육에서 이념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독의회는 1970년 9월 16일 ‘성인교육기관이 사회주의체제에 기여해야 할 원칙’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사회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성인교육기관의 목적은 다면적으로 계발된 사회주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지식을 확고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소유하고, 동독사회주의 사회와 경제의 특징을 잘 알고, 현대 기술과 생산관계를 잘 이해하여, 사회주의 국가·경제·문화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고, 생산경제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조국인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수호하는 데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다.”<sup>43</sup>

## (2)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사회교육을 수행하였던 모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서독처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별도의 전담기관이 없었다. 모든 주요 교육기관에서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았다. 성인대학, 기업체 부설대학<sup>44</sup> 등이 대표적인 사회정치사상교육기관이었고, 동시에 각종 강연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5</sup>

.....

<sup>43</sup>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DR über die Grundsätze für die Aus- und Weiterbildung der Werktätigen bei der Gestaltung des entwickelten gesellschaftlichen Systems des Sozialismus in der DDR vom 16. Sept. 1970, p.200.

<sup>44</sup> 북한의 공장대학과 유사한 성인 고등교육기관이다.

<sup>45</sup> J. Olbrich(2001).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Bonn, p.289.

표 1-2) 통일 전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사회정치사상교육 담당기관	사회정치사상 교육기관	성인대학
		기업체 부설대학
		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비형식 사회정치사상교육	각종 강연회
문화행사, 문화관, 도서관, 대중매체 등		

### (3)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

통일 전 동독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을 고찰하기 위하여 그 배경 요인이 되는 사회교육의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통일 전 동독 사회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점은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독이 소련점령지였을 때 성인교육의 최대 목적은 정치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에 놓여 있었다<sup>46</sup>. 정치사상교육이란 여기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교육이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동독국가가 건설된 이후 사회교육에는 직업교육 또는 직업자질 함양이 주요 과제로 추가되었다. 1948년 제1차 경제계획이 선포되면서 직업교육이 시급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대변하듯이, 1950-1951년부터 기업체 부설대학이 건립되었다. 즉, 동독 사회교육의 두 번째 목적은 성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54년 6월 ‘학문적 인식을 준비하는 사회’라는 헌장이 선포되면서, 사회교육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되었다. 기존의 이념교육, 직업교육과 더불어 일반 교양의 함양이 사회교육의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때부터 동독 사회교육의 세 가지 과제, 즉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 동독사회에

<sup>46</sup> E. Emmerling(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66ff.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sup>47</sup>.

통일 전 동독의 교육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비록, 사회교육이 이념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은 이념교육이었다. 따라서 이념교육을 제외하고는 동독의 교육을 논할 수 없다.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 역시 이념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점에서 동독의 학교정치사상교육과 사회정치사상교육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독의 체제를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체제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야 할 대상으로만 가르쳤다. “성인대학의 과제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인식과 민주주의 정신을 심어주어, 반파시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sup>48</sup>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주의체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일반 성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인대학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통로이다. 성인대학은 정치, 과학, 기술, 예술 등 제 분야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사회주의적 의식을 매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49</sup>

#### (4)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내용

통일 전 동독에서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

<sup>47</sup> J. H. Knoll, H. Siebert(1968). *Erwachsenenbildung-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p.16.

<sup>48</sup> E. Emmerling(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p.80.

<sup>49</sup> E. Emmerling(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p.80.

이념교육, 마르크스-레닌주의 가치관교육, 반혁명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가치관과의 논쟁,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특징과 우월성 인식, 제국주의적인 서방세계와의 정치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과 논증능력 등이었다<sup>50</sup>.

동독 사회정치사상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전 라이프치히(Leipzig)에 있었던 성인교육연구소(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 an der Universität Leipzig)<sup>51</sup>의 교육과정을 사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sup>52</sup>. 1968년 라이프치히 성인교육연구소에는 약 9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전공, 부전공, 추가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전공교육과정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교육과정이었다. 부전공교육과정에는 정치경제, 철학, 역사, 과학적 사회주의 등 사회주의 이념교과목이 중심을 이루었다. 추가교육과정 가운데 중요한 교과목은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사회주의 경제의 정치경제적 기초, 소련교육학, 성인교육심리학, 개별 교과목의 교수학 등이었다. 전공을 제외하고 모든 주요 교과목이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교과목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동독에서 사회정치사상교육이 교육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주로 이념교육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5) 사회정치사상교육의 특징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동독 사회정치사상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동독의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sup>53</sup>. ‘다면적으로 도야

<sup>50</sup> H. Klein(1974). Bildung in der DDR-Grundlagen, Entwicklungen, Probleme, Hamburg, p.32.

<sup>51</sup> 1948년에 설치된 위 연구소는 동독의 대학에 설치된 유일하고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성인 교육기관으로 주로 교장, 장학사, 대학강사 등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sup>52</sup> J. H. Knoll, H. Siebert(1968). Erwachsenenbildung-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p.35.

<sup>53</sup> J. H. Knoll, H. Siebert(1968). Erwachsenenbildung-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p.17.



된 사회주의 인격'을 갖춘 사회주의 인간 육성을 완성하는 것이 사회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이었다. 둘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유일한 과학적인 철학으로 인정되고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졌다. 더불어 사회과학(역사, 마르크스 사회이론 등)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간주되었다. 사회교육의 주요 분야인 교양교육이나 직업교육 역시 마르크스 교육학이 기초 학문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셋째, 교육방법에 있어서 성인들에게 필요한 대화나 토론 방법 보다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교화(Indoktrination)가 강조되었다. 성인 학생들은 수업활동에서 피동적으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인식되었다. 넷째로, 사회정치사상교육기관은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움직여졌다. 서독의 경우와 같이 민간 교육기관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점은 '통일적인 사회주의 교육체계에 관한 법'<sup>54</sup>이 뒷받침하였다.

### 3. 통일 전 동서독 정치교육 비교

#### 1) 학교정치교육 비교

##### (1) 정치교육(통일교육) 정책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행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동방정책 이전에는 서독체제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동방정책 이후에는 동독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매개하고, 양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평화와 민주, 자결의 이념 아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독은 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다.

<sup>54</sup>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반면, 동독 정치사상교육의 기본 정책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그 이념의 현 실태인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고, 서독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이념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 (2)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

서독 학교정치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동독 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동독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었다.

## (3)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내용

서독에서 정치교육의 내용은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비교,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이 주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반면, 동독에서는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자본주의체제의 모순과 동독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가르쳤다.

#### (4)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비교, 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양 체제를 비교하고, 어떤 체제가 우월하고 통일 후 어떤 체제를 지향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따라서 특정 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토론 수업이 강조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방적 우월성을 학생들에게 교화(In-doktrination)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비록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방법으로서 논쟁과 증명 등이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이념을 체득하는 것에 모아졌다. 자유로운 토론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판단과 입장을 강조하였던 서독의 교육방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중 인격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생각과, 내면적인 진실된 생각이 서로 다른 이중적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표 1-3) 통일 전 동서독 학교정치(사상)교육 비교

	서독	동독
정치교육의 목적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 고취 동독에 대한 객관적 이해 올바른 통일 가치관 형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주입 사회주의 시민으로 육성 사회주의 혁명 과업 완성
정치교육의 내용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국제정세 소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강조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정치교육의 방법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개 토론수업 비교/체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교화

#### 2) 사회정치교육 비교

##### (1)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

통일 전 서독의 사회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다루어졌다. 정치교육의 목적 역시 민주적 소양을 키우

고, 동독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추게 하고, 올바른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데에 모아졌다.

반면, 동독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가르치는 데 정치사상교육의 대부분이 할애되었다.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서구 자본주의체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대립과 투쟁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과 국제정세, 통일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 (2)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내용

정치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서독에서는 동독체제에 대한 객관적 지식 전달, 동서독체제의 비교, 동서 냉전체제에 대한 이해, 국제관계 등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일반 성인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등 사회주의 이념을 주 교육내용으로 삼았고, 서독과 관련해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주로 가르쳤다.

## (3)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

서독에서는 정치교육이 대부분 강의와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이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주요 교육방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성인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교육을 받았고, 그 효과도 컸다.

반면, 동독에서는 대화와 토론보다는 지식을 주입하고 교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이념은 토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정치교육에 임하였다.

## (4) 정치교육(통일교육) 담당기관

서독에서는 정치교육 담당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인 연방정치교육센터와 11



개 주정치교육센터,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 등이 있었고, 정당 재단, 그리고 교회,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많은 사설 정치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국가와 민간이 모두 정치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회정치교육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독에서는 모든 사회교육은 국가가 관장하였다. 동독의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가 관장한 것과 같이 사회정치교육 역시 국가의 소관사항이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교육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표 1-4) 통일 전 동서독 사회정치(사상)교육 비교

	서독	동독
정치교육의 목적	민주소양 고취 동독에 대한 객관적 이해 올바른 통일외식과 통일외지 함양	사회주의 이념 주입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강조
정치교육의 내용	동독에 대한 객관적 소개 동서독 체제의 비교 국제관계	사회주의 철학, 사회주의 정치경제 사회주의 이념
정치교육의 방법	강의와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	지식의 주입과 교화
정치교육 기관	정치교육센터 정당 재단 민간단체	국가가 관장 민간 배제

## 제2절 독일통합과 통일 후 정치교육

독일통일 직후 정치교육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 주민의 재사회화와 내적 통합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독일 통일정부는 서독의 정치교육 시스템이 서독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정치교육 시스템을 동독에 도입할 경우 비슷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서독식 정치교육을 동독에서 실시하였다. 즉,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동독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

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통일 후유증이 심해지고 그것이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통일정부는 정치교육의 위기로 보고, 정치교육에서 통일 후유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이후에는 독일통일 문제가 심리적 갈등과 대립 문제로 비화하자 심리적 통합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다루었다.

## 1. 학교정치교육 분야 통합

독일통일은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주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서독과 통일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는 형태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기존 동독의 제도는 사라지고, 서독식 제도가 동독에 확장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치교육 분야에서는 동독의 정치사상교육이 완전히 사라지고 서독식 정치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정치교육 분야의 통합이란 서독식의 정치교육이 동독지역의 학교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 1) 학교정치교육 개요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모든 주에서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실시되었다. 구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와 이념교육은 폐지되었다. 구동독지역의 각 주(신연방주)는 고유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주에서 만든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정치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과서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의 정치교육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다.

## 2) 학교정치교육 목적

독일에서는 교육의 권한이 주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역시 주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대표적인 주를 선택하여 살펴보면, 통일 후의 구동독지역의 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동독지역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사례로 정치교육이 통일 후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sup>55</sup>. 브란덴부르크주는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6개 주를 선도하는 주로서 인정받고 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정치교육을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 아래 수행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적인 의견 형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교육은 관용, 책임성, 비판능력, 타인의 개인성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이념적인 교화를 배제한다.
- 정치교육은 단순한 민주사회에 대한 지식전달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원칙, 인권, 계몽 이념을 지향한다.

<sup>55</sup>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Hrsg.)(1994). Vorläufige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ische Bildung, Potsdam.

- 정치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복잡한 세계를 파악하고, 사물 관련 지식과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과정이다. 지식과 인식의 전수는 한편으로는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관용, 협동, 결속력, 갈등해결 등의 사회적 행동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이다.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의 함양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 요소이다.

정치교육의 목적을 요약하면,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즉, 정치교육은 한마디로 ‘정치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치역량에는 지식, 능력, 자질, 가치, 태도, 통찰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치역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지배관계의 의미, 목적, 필요성, 강요 등을 묻고, 그 안에 숨겨진 이해와 규범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지배관계 및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묻고, 이해하고, 이용하고, 만들어 가는 능력과 의지
- 대화와 의사소통이 민주사회, 민주정치, 민주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아는 것



- 정치적인 대안들을 생각하고 배우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립을 해결하고, 상이한 집단에서 함께 일하고, 그와 관계되는 어려움을 인내하는 능력과 자세
- 자아실현, 자율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회적인 책임 아래서 계획하고,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이해를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해를 인식하고 때로는 그것에 우선권을 두는 능력과 의지
- 다른 사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는 능력과 자세
- 개인적으로 또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에 참여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능력과 자세
- 노동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존립근거요 자아실현과 정치적인 참여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직업세계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참여하려는 자세와 능력

### 3) 학교정치교육의 내용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의 학습영역은 4가지로 구성된다: 사회-경제-민주주의-국제사회. 이 네 가지 영역은 정치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조직체계가 된다. 위 네 영역은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 아래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위와 같은 정치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기본계획안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5)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과정기본계획안 구조

학년	사회	경제	민주주의	국제사회
7/8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집단</li> <li>•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li> <li>• 오씨스-베씨스</li> <li>• 여가 이용</li> <li>• 중독의 위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경제와 광고</li> <li>• 소비행태</li> <li>• 일자리와 실직</li> <li>• 사회보장제도</li> <li>• 노동단체</li> <li>• 독일통일의 경제적 결과</li> <li>• 교통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종과 참여 사이의 학교</li> <li>• 법치국가의 특징</li> <li>• 정당과 시민운동의 기능</li> <li>• 구동독체제의 목표와 현실</li> <li>• 의회민주주의제도</li> <li>• 시민과 대중매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과 저개발의 문제점</li> <li>• 자연의 착취</li> <li>•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 협력의 필요성</li> <li>• 유럽통합의 문제</li> </ul>
9/10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선택</li> <li>• 공동체적 삶</li> <li>• 중독과 미약</li> <li>• 구동독의 구조변혁</li> <li>• 인권으로서의 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사회의 생태적 구조변화</li> <li>• 동독 경제적 변혁의 문제점</li> <li>• 사회적 시장경제</li> <li>• 노동시장</li> <li>• 직업세계에서의 이해관계와 갈등</li> <li>• 생태적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의 갈등</li> <li>• 정치선거</li> <li>• 극단주의와 폭력</li> <li>• 통일 이후 시민운동의 역할</li> <li>• 대중매체의 영향</li> <li>• 국가적 권력구조의 형태와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장 정책</li> <li>• 유럽통합과정의 문제점</li> <li>• 전세계적 상호협력의 가능성과 난점</li> <li>• 부국과 빈국 사이 문제의 상호관련성</li> </ul>
11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과 서독에서의 사회화</li> <li>• 외국인적대감과 극우주의</li> <li>• 청소년 범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 소비행태</li> <li>•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일자리</li> <li>• 브란덴부르크주 산업화와 구조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권력으로서 대중매체</li> <li>• 민주주의 모델 비교</li> <li>• 미래의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보의 변증법</li> <li>•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li> <li>• 종교</li> </ul>
12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에서의 사회적 불평등</li> <li>• 교육제도와 기회균등</li> <li>• 소수민족의 존립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의 경제정책</li> <li>• 선진산업사회의 생태적 구조변화</li> <li>• 석탄과 기타 에너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참여와 시민운동</li> <li>• 학교법, 지방법, 기본법</li> <li>• 통일조약과 그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대결의 종료와 국가주의 추세의 강화</li> <li>• 제3세계</li> <li>• 세계문제 해결에서 첨단기술의 역할</li> </ul>
13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정책</li> <li>• 나치시대의 인종정책</li> <li>•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여성노동자의 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세기 경제정책과 경제이론</li> <li>• 20세기 경제발전과 과학</li> <li>• 개인과 국가의 경제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시즘과 사회주의 비교</li> <li>• 바이마르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비교</li> <li>• 1945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바위기와 냉전</li> <li>• 동유럽의 역사와 후기사회주의의 미래</li> <li>• 아프리카의 역사</li> </ul>

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살펴볼 때,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서독지역의 정치교육과정의 기본 형태가 도입되어 동독지역의 정치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육 전반에 걸쳐 서독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점은 정치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정치교육은 서독지역의 정치교육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구동독에서 행해졌던 이데올로기 교육은 완전히 사라졌다. 둘째,



정치교육의 목적을 민주적 사고와 태도의 형성에 두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에는 통일 이후의 문제점, 예를 들어, 동서독 간의 차이, 동독지역의 상황 등의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통합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그러나 통일 직후 사회문제가 되었던 동서독의 의식의 갈등과 구동독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부적응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 그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결여와 적절한 대책의 부재는 결국 통일 후 오랫동안 의식 통합 문제 등 통일후유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4) 정치교육 담당 교원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의 각 주는 서독식의 교육제도와 함께 교원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서독식의 교원임용제도는 다단계로 교원의 자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원 지망생들은 4-5년 간의 대학학업을 마치면, 1차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하고, 그것에 합격하면 2년 간의 교원연수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 교수능력이 검증되면 2차 교원임용고사를 치러 최종 합격하면 교원으로 발령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교원지망생이 교원이 되려면 최소한 7-8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구동독지역의 각 주는 정치교육과 같이 이념적인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는 새로운 교원임용제도에 따라 교육과 연수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구동독 시절 ‘국가시민’ 교과는 서독식의 ‘정치교육’ 교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학생들은 ‘국가시민’ 교과 담당 교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사 양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구동독지역의 각 주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정치교육’ 교과는 1991-1992년에는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서, 1992-1993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상급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치교육’ 교과를 가르칠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정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교사부족, 학교 내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자질 부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잠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실행되었다. 첫째, ‘정치교육’ 교과 교사는 처음에 모두 타 전공 교사들에 의해 잠정적인 수업 허가 아래서 이루어졌다. 정치교육 교사들은 성격상 이념시비를 받는 주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의 일부는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연구소에서 3년 간의 추가 교육을 받았다. 셋째, 일부 교사들은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versitaet in Berlin)에서 2년 간의 별도 교육을 받았다. 넷째, 또 다른 부류의 교사들은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연구소에서 여러 날에 걸쳐 교사 재교육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는 물론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이미 구동독의 이념교육에 질린 상황에서, 새로운 이념교육인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사들 조차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념교육과 같이 가치가 개입된 교과를 교사들이 신념을 갖고 가르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사회정치교육 분야 통합

학교정치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치교육 분야 통합 역시 동독의 정치사상교육이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통합되었다. 정치교육이 통합되었다



기 보다는 서독식의 정치교육에 편입된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 1) 사회정치교육 개요

통일 직후 독일의 사회정치교육에서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가치관을 매개하는 것과 더불어 동서독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통일독일 정부는 구동독지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통일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교육의 주요 방향은 구동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에 모아졌다<sup>56</sup>.

통일독일 정부와 정치교육담당자들은 과거 서독에서 정치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이, 정치교육을 통하여 구동독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구동독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기대 하에 통일 이전 구서독지역에 있었던 정치교육기관들이 구동독지역에도 확산되어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동독지역의 각 주에 정치교육센터가 설치되었다. 정당의 정치교육재단과 교회 등 사설 정치교육기관도 구동독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사회정치교육은 학교정치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의 사회정치교육기관이 모두 해체되었고, 목적과 내용과 방법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정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정치교육으로 바뀌었

.....  
<sup>56</sup>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p.125.

다. 통일 이전에는 주입식 정치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통일 이후에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정치교육으로 바뀌었다.

주로 서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이 구동독지역에 확산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구서독의 정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단지 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일부 추가되었다.

이러한 통일 이후의 통일교육을 위하여 독일정부는 연방정치교육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1년 말 통일 전 내독성 산하기관인 ‘전독연구소’를 해체하고 그 정치교육 기능을 연방정치교육센터에 이관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1993년 이후 동서독국민의 심리적 통합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내적 통합(Innere Einheit)’이란 이름의 별도의 본부를 설치하고, 동서독주민 간의 심리적 통합을 정치교육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정치교육, 통일교육(통합교육)이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 2)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

통일 후 독일에서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은 대단히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매년 그 범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는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본산인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sup>57</sup>. 통일 이후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된 중점 추진사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sup>57</sup>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0-1999, Bonn.

### (1) 1990년

통일된 해인 1990년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주된 관심사는 구서독의 정치교육을 동독지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었다<sup>58</sup>. 동독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체제를 이해하고 그러한 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정치교육을 통하여 도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치교육센터는 기존에 해오던 정치교육용 간행물 발간사업을 확대하여 동독주민들도 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9년 가을의 동독 시민혁명 사건을 주요 테마로 다루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아직 통일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세워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 (2) 1991년

1991년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중심 테마는 신연방국가(구동독지역)와 통일이었다<sup>59</sup>. 독일통일이 대단히 신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1991년에 와서야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1991년부터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이후 독일 사회정치교육의 과제를 연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1991년에는 신연방지역(구동독지역)에 세워진 주정치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1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이론/정치교육,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 (3) 1992년

1992년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 주제는 동독과 통일이었다<sup>60</sup>. 그러나 1992년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은 큰 도전을 맞게 된다. 통일휴유증으

<sup>58</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0, Bonn, 1991, p.5.

<sup>59</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1, Bonn, 1992, p.5.

<sup>60</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2, Bonn, 1993, pp.5-6.

로 인하여 동독과 서독주민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특별히 급속히 성장한 폭력적 경향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정치교육에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배경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992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미래사회 등 네 가지였다.

#### (4) 1993년

1993년 연방정치교육센터 사업의 핵심 주제는 극우주의와 폭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다원화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sup>61</sup>. 이를 위해 특별히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구동독(신연방주)지역에 정치교육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연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히 1993년부터 동서독국민의 심리적 통합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어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졌다. 1993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네 가지였다.

#### (5) 1994년

1994년에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독일사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sup>62</sup>. 이를 위해 극우주의 및 폭력과 대항하여 정치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구동독주민의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특별히 구동독 전체주의체제를 정치교육의 주제로 다루었다. 더불어 구동독지역 정치교육 교사들의 재교육과 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94

<sup>61</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3, Bonn, 1994, p.5.

<sup>62</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4, Bonn, 1995, p.5.





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대중매체, 4)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네 가지였다.

### (6) 1995년

1995년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1992년 이후 독일사회를 흔들고 있는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범죄, 폭력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sup>63</sup>. 특별히 통일 5주년을 맞이하여 동서독주민 간의 갈등과 심리적 통합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가능성을 제공하며, 관용과 이해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는 향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sup>64</sup>. 1995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 (7) 1996년

1996년에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핵심 과제는 독일통일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었다<sup>65</sup>. 동서독주민들의 의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거리를 좁히고, 통일독일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작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1996년 다루어진 주요 테마는 1) 독일/독일사, 2) 국제정치, 3)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4) 대중매체, 5) 전시회 등 다섯 가지였다.

<sup>63</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5, Bonn, 1996, p.7.

<sup>64</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5, Bonn, 1996, p.74.

<sup>65</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6, Bonn, 1997, p.7.

### (8) 1997년

1997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은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sup>66</sup>. 1997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새로운 독일 국가의 탄생, 2) 심리적 통합, 3)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4) 환경문제, 5) 개발도상국가, 6)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 (9) 1998년

1998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역시 1997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에 모아졌다<sup>67</sup>. 1998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체제, 3) 경제와 사회, 4) 독일 역사, 5) 유럽, 6)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심리적 통합,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등이었다.

### (10) 1999년

1999년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는, 독일통일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가능성을 정치교육을 통하여 모색하려 하였다. 둘째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sup>68</sup>.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1999년에 다루어진 주제는 상설과제와 중점과제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상설과제

<sup>66</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7, Bonn, 1998, p.101.

<sup>67</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8, Bonn, 1999, p.124.

<sup>68</sup>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Tätigkeitsbericht 1999, Bonn, 2000, pp.8-9.

는 1) 기본가치, 2) 자유민주주의체제, 3) 사회, 4) 경제, 5) 독일 역사, 6) 유럽, 7) 국제관계 등이었다. 중점과제는 1) 심리적 통합, 2)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3) 환경문제, 4)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5) 학문과 사회의 미래 등이었다.

표 1-6)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 주요 사업(1990-1999년)

연도	주된 관심사	주요 테마
1990	• 독일통일	• 1989년의 시민혁명
1991	• 신연방국가(구동독지역)와 통일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정치이론/정치교육, 미래사회
1992	• 동독과 통일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정치이론/정치교육, 미래사회
1993	• 극우주의와 폭력, 평화적인 공존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4	• 독일사회의 기본가치를 가르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수호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평화적인 공존을 유도하는 것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5	•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극우주의, 외국인 적대주의, 범죄, 폭력, 심리적 통합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전시회
1996	• 동서독주민들의 의식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편견을 극복하고 거리를 좁히고, 통일독일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에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작업	• 독일/독일사, 국제정치, 대중매체,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전시회
1997	•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	• 상설주제 :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와 사회, 독일 역사, 유럽, 국제관계 • 중점주제 : 새로운 독일 국가의 탄생, 심리적 통합,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개발도상국가,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1998	•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들을 매개하는 것과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	• 상설주제 :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와 사회, 독일 역사, 유럽, 국제관계 • 중점주제 : 심리적 통합,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1999	• 독일통일 과정을 촉진하는 것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 상설주제 : 기본가치, 자유민주주의체제, 경제와 사회, 독일 역사, 유럽, 국제관계 • 중점주제 : 심리적 통합,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 학문과 사회의 미래

통일 후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추진한 정치교육 사업을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볼 때, 통일 직후에는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적 질서를 동독주민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통일 후유증이 심해지고 그것이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의 위기로 보고, 통일 후유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이후에는 독일통일 문제가 심리적 갈등과 대립 문제로 비화하자 심리적 통합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 다루었다. 독일국민의 심리적 통합 문제는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정치교육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다. 둘째, 내용적으로 볼 때, 통일 후 사회정치교육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 동독의 공산주의체제, 동서독의 역사, 동서독 체제의 비교, 구동독 공산주의체제 아래서의 생활, 심리적 통합 등 통일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졌다. 이 점은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과 통일교육(통합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방법적으로 볼 때,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후 사회정치교육을 이전에 정치교육에서 활용하던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였다. 간행물, 연수, 대회, 시청각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 3. 통일 후 독일 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통일 이후에는 정치교육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과제가 추가로 부여되었다. 더불어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재사회화되고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여기서는 통일 후 독일의 정치교육이 이러한 과제들을 적절히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겠다.

#### 1) 학교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1989년 구동독의 붕괴는 민주주의, 인권, 다원주의, 법치국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



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정치적 구조는 해체되었고, 경제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여러 사회적인 제도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불어 독일과 유럽의 통합과정, 소련의 붕괴, 전세계에서의 독립운동 등 국제정치적인 변화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통일과정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의 빠른 변화 상황에서 학생들은 적응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구동독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

특히 구동독 청소년들은 통일 후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확신하였던 가치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르쳐졌던 이념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 이전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존속하였던 체제가 영구히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우 혼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부모나 교사 등 기성세대 역시 가치 혼란과 방향 상실 등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르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뒤바뀐 것이다. 사회주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뒤바뀌었다. 이제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형태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교육 내용에서는 동서독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이 문제였다. 통일은 서독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이전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동독지역 학생들에게는 자기부정 및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동독 국가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동독지역 학생들은 구동독 시절 국가가 주입하는 정치사상교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구동독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는 데 정치교육이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적이고 다원주의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주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통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구동독지역 학생들의 정치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sup>69</sup>. 통일 전 동서독인들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동독인들이 사회주의

<sup>69</sup> 허영식(1996). 민주시민교육론, 배영사, pp.101-102.



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서독인들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이질성은 동서독인들의 내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동서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치교육은 기대한 결과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통일 초기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구동독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신속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좌절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1993년 드레스덴(구동독지역 소재) 공과대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2.3%의 대학생들이 구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PDS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회귀현상은 열등학생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찬성하지만, 40-60%에 달하는 상당수의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동독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고 조사되었다<sup>70</sup>.

셋째, 구동독 청소년들의 좌절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으로 인한

.....  
<sup>70</sup>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1993).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p.4. 이러한 구동독에 대한 향수는 오스탈기에(Ostalgie)라는 말을 만들어 내며 구동독에 대한 향수가 한때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을 낳았다.

폭력성은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51.9%의 동독 청소년들이 폭력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sup>71</sup>. 구동독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로 향하였다. 1992년에는 단지 2.2%만이 외국인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반면, 1993년에는 외국인 적대감이 훨씬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성과 외국인 적대감정은 극우주의 성향의 표현이다. 비록 조직적이거나 이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구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극우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나치시대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구동독에서는 민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가치 혼란의 시대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90년 통일 직후 대부분의 구동독 청소년들은 분명 적응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방향상실감, 행동의 불안정, 적대감, 편견, 공격성과 폭력 등으로 부적응이 표출되었다. 특별히 대량실직 등 통일 휴유증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1992-1993년은 외국인 적대감, 극우주의 등 수많은 부정적인 양상이 강하게 표출된 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비교적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구동독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은 눈에 띈다. 1993년 독일의 주간지 디차이트(Die Zeit)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이하의 구동독 청소년들은 새로운 제도에서의 적응과 학습 속도가 빠르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서독주민들과 동화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반면 어른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체제에

<sup>71</sup> L. Böhnisch, u.a.(1992). Gesellschaftsstudie, Dresden, p.27.

<sup>72</sup> 통일원(1994).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p.242.





동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 여성, 실업자 및 조기퇴직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바이어(Beyer)의 조사에서도 구동독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독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75%의 청소년들이 문제가 거의 없다고 대답하였고, 20%만이 서독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를 해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약 20%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다<sup>73</sup>.

높은 실업률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극우주의 같은 현상들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이 점은 구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점차 잘 적응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특별히 이 점은 구동독의 학생들이 구서독의 학생들보다 폭력적이고, 외국인에 적대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할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은 변혁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듯이, 1992년에는 약 42%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졌으나, 1994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반면, 1992년에는 17%의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졌으나, 1994년에는 28%로 증가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호적이었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과의 우호적인 접촉도 1992년 20%에서 1994년에는 38%로 높아졌다. 더불어 반유대주의적인 성향도 1992년 17%에서 1994년에는 12%로 감소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점차 다양한 의견을 소유하게 되었다.

.....  
<sup>73</sup> H.-J. Beyer(19906).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p.35.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였다. 통일 10년이 지난 후 동서독 청소년들의 삶의 형태나 가치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74</sup>. 정치적인 성향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겉으로 볼 때, 동독 청소년들은 새로운 통일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서독 청소년들의 상황과 의식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독식의 체제에 대한 믿음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별히 동독지역에서는 극우주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폭력 현상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극우주의 성향의 청소년들의 폭력은 통일 10년이 지난 즈음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sup>75</sup>.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의 주요 원인은 구동독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통일 후 동독지역의 사회적인 환경,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6</sup>. 극우주의는 통일에 대한 실망, 자신 또는 부모가 처한 실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미래사회의 새롭고 높은 성취 요구,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결여 등 개인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일자리, 집, 가정 등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생활조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sup>77</sup>. 청소년들은 자

.....

<sup>74</sup> H.-J. Veen(1999). Juge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ihr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im Vereinigungsprozeß, Deutscher Bundestag(Hrsg.),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d.III/3, Baden-Baden, pp.2394-2448.

<sup>75</sup> H.-G. Golz(2000). Verlorene Generation Ost?-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p.162.

<sup>76</sup> H.-G. Golz(2000). Verlorene Generation Ost?-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pp.163-164.

<sup>77</sup> Die Welt vom 19.4.2000.



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교사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매년 약 80,000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sup>78</sup>. 통일 10년 후 많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스스로 통일독일의 ‘2등 시민’으로 평가하였다<sup>79</sup>. 구동독지역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점차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 핵심 지지세력이 청소년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구동독지역의 많은 청소년들 역시 부모세대와 함께 통일 10년이 지난 후에도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구동독이 붕괴된 직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독일통일이 만약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신속히 전개되면서, 구동독의 교육정책가들은 시간을 두고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서독식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데 급급하였고,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상황에 적합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통일이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통일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구동독지역의 학교정치교육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 2) 사회정치교육에 대한 평가

독일에서 통일 전후 사회정치교육은 서독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일 전후 서독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동독지역의 정치교육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통일 전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일 후

<sup>78</sup> H.-G. Golz(2000). Verlorene Generation Ost?-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p.170.

<sup>79</sup> P. Förster(1999). Die 25jährigen auf dem langen Weg in das vereinte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3-44, pp.20-31.

에는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즉, 동독식의 사회주의 이념 교육에서 서독식의 다원화된 민주주의체제를 익히는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도 큰 문화충격을 주었고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통일정부는 구동독지역에서도 단지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시키면 서독주민들처럼 민주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고,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사회정치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주정치교육센터 등 여러 정치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세우고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둔 것처럼, 동독에도 서독식의 정치교육기관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독의 제도를 이식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동독지역 주민들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동서독주민들 간의 심리적 장벽이 정치교육과 통합교육의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닫으면 그것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통일된 지 10년이 지난 후 독일국민의 정치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획득 수준, 정치적인 입장, 정치참여 행위면에서 서독지역 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의도하였던 동서독의 균형은 찾을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참여, 선거참여율 등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은 서독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당이나 노조에 대한 참여도 낮고,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 행위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보였던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형성은 통일 10년이 지난 후 거의 상실되었다. 구동독 시절 정치이



데올로기에 희의를 품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도덕적’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정치 이해와 풍토가 구동독주민들의 의식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

구동독주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혐오를 느끼게 된 원인은 구동독 정치문화의 영향, 통일의 과정에 대한 불만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특별히 세 가지 점은 언급할 만하다. 첫째는, 통일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식이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통일사회가 분명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은 ‘2등 국민’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열등감이다. 구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경제 지원을 건강한 통일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라기 보다는 난민 구호금이나 자선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무력감이다. 자신들이 통일독일을 가꾸어 가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통일 이후 형성된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점은 구조적인 측면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반면, 서독에서는 동독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면서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안목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동독인의 눈에는 ‘공격적이고 잔인하게’ 서독식의 정치문화를 매개하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동독지역 정치문화의 문제점이 동서독의 불균형적인 의식의 문제인 동시에 서독의 지배문화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해갈 수 있는 능력이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결여된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한 민주적인 정치역량의 결여는 극단적인 정치행태를 결과로 가져왔다. 구동독지역에서 있었던 선거에서 구동독 공산당의 후예정당인 독일사회

당(PDS)이 대약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1999년 베를린주 선거에서 독일사회당(PDS)은 전체적으로는 17.7%로 기민당과 사민당 다음인 제3정당을 차지하였고, 동베를린지역에서는 39.5%로 제1당을 차지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0년과 1995년의 선거와 비교해 볼 때, 대약진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베를린은 구서독 정당을, 동베를린은 구동독 정당을 택하는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sup>80</sup>. 또 하나의 사례로 극우주의 성향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극우주의 정당의 당수인 하이더(Haider) 논쟁에 대한 2000년 2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하이더와 같은 인물이 독일 정치계에도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주민 가운데 15%가, 서독주민 가운데 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독일국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극우주의 정당의 출현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동독주민 가운데 19%가, 서독주민 가운데 1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sup>81</sup>. 중도적인 정당보다는 극좌와 극우정당 모두에서 동독지역 주민들의 찬성이 높다는 사실은 모순되면서도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후 구동독지역 정치교육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구동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서독식의 정치교육 모델이 그대로 수용되어 전개되었다. 서독의 모델에 따라 신연방 각 주에 주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정치교육 담당부서가 동독지역에도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교회 등 여러 종류의 기관에서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독식의 정치교육을 그대로 구동독지역에 적용하면 정치교육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였다. 곧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sup>82</sup>.

첫째, 정치교육을 위한 재정이 공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재정이 고갈되었

<sup>80</sup>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2000). Berliner Statistik, 2000, pp.20-22.

<sup>81</sup> E. Crome, B. Muszynski(2000).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sup>82</sup> E. Crome, B. Muszynski(2000).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을 때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고, 정치교육 장소나 시설도 낡아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둘째, 정치교육 기관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동독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교육 담당자들의 의식과 열성과 노력이 서독지역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 서독식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결여는 수요자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참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무관심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넷째, 정치교육 수요자들의 무관심은 공급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질적으로 매력 있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의 개발에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히 정치교육 담당자인 강사의 질적인 결여를 가져왔다. 그들은 정치교육 계획이나 정치교육 교수법에 익숙해지지 않아 정치적인 토론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구동독지역은 통일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결속력 있는 단체와 모임이 미약해져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에서처럼 정치교육 단체에 대한 후원이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사고와 방법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여섯째, 실천적인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읍·면·동 등 낮은 단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만개되어야 하는데, 구동독지역에서는 아직도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정치조종에 익숙해져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불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동독이 붕괴할 때 시민연합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원탁회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로 인정되는 시민사무실, 미래설계실 등 시민참여는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힘든 현상이었다.

통일 20년 후에도 동서독의 사회통합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을뿐 아니

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의 불평등 구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독주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2등시민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독정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연됨으로써 통일 20년 후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동독에 대한 향수’라는 뜻을 지닌 오스탈기(Ostalgie)<sup>83</sup>란 말이 독일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동독주민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2005년 서독주민들의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독주민들은 3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84</sup>. 독일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구동독주민들은 1990년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997년에는 22%로 낮아졌다.

2009년 독일 알렌스바흐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지역 주민의 63%가 서독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느낀다고 응답하였다<sup>85</sup>. 2008년 실시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센터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22%만이 자신을 실질적인 독일인이라고 응답하였다<sup>86</sup>. 삶에 대한 만족도는 1990년에는 5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42%가 독일 전체 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갖고 있고, 52%의 주민들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나 하급노동자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46%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3.9%의 동독국민들은 자신들을 서독주민들에 비해 2등 국민으로 여기

<sup>83</sup> 향수라는 독일어 Nostalgie와 동쪽이라는 독일어 Ost를 합성한 단어로 동쪽에 대한 향수, 즉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음.

<sup>84</sup> 정병기(2010). 독일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 진보평론, 제46호 (2010년 겨울).

<sup>85</sup> B. Seliger(2009). 독일통일 20년-정치·사회·경제적 결산.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p.46.

<sup>86</sup> 손기웅 외(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p.66.



고 있고, 73%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7</sup>.

최근 구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Die Linke가 구동독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다. 무실업, 탄탄한 사회보장제도 등 구동독 사회주의 사회의 장점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서독인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상처, 새로운 사회에의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동독에 대한 향수(Ostalgie 현상)가 구공산당의 지지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표 1-7 > 동서독주민의 정당 지지율

(단위 : %)

	1990		2009	
	구서독	구동독	구서독	구동독
기민당(CDU/CSU)	44.3	41.8	34.6	29.8
사민당(SPD)	35.7	24.3	24.1	17.9
자유당(FDP)	10.6	12.9	15.4	10.6
좌파당(Die Linke)	0.3	11.1	8.3	28.5
녹색당(Gruene)	4.8	6.2	11.5	6.8
기타	4.3	3.7	5.9	6.3

\*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종합적으로 볼 때,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행태는 분명 통일정부가 기대하였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지만, 통일 후유증과 결부되면서 정치교육의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sup>87</sup> 손기웅 외(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p.74.

## 통일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 상황

### 제1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 1. 정치교육 관련 연구

##### 1) 배경

동서독과 남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다.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분단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통일을 열망한 측면도 유사하다. 통일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노력만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나, 두 나라 모두 통일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정치교육(또는 통일교육)은 일찍부터 우리의 관심 대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정치교육이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그 내용상 정치교육, 경제교육, 법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주목받고 연구되었다.

대한민국도 해방 이후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에서는 ‘사



회' 교과 안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정치교육, 법교육, 경제교육,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정치교육이 주목을 받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독일의 정치교육을 연구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초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교육이 민주시민교육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영웅, 1982; 전득주 외, 1992, 2000; 허영식, 1996; 전득주·페터마상·허영식 편, 2006). 독일에서 유학한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의 정치교육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점은, 그들의 정치교육이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내용적으로 유실하게 운영되었고, 또 그 효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역할에 힘입어 민주시민 양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치교육이 통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안에 통일교육 요소가 포함된 점, 정치교육이 통일준비에 기여한 점,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사회통합에 기여한 점이 주목 받았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독일의 정치교육이 우리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다(전득주 외, 1995; 황병덕, 1995; 김창환 외, 2001, 2002).

## 2) 연구물 현황

지금까지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연구하였다(김영웅, 1982; 전득주 외, 1992, 2000; 허영식, 1996; 전득주·페터마상·허영식 편, 2006).

시기적으로 보면 통일 전에 실시되었던 정치교육과 통일 이후에 실시된 정치교육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서독의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독일통일 전후 정치교육 연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정치교육은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김주성, 1994; 김경모 외 2002; 이규영, 2005; 원준호 외, 2014)의 관점과 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교육(마석한, 1999; 이병련, 1999, 2000; 김상무, 2005, 2009, 2010, 2011, 2013; 김기봉, 2014)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사회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정치교육 연구는 주로 정치교육 기관들과 그 활동을 소개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김창환, 2001, 2002; Ruminski, 2012).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치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독일 사회정치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정치교육 연구에 비하여 연구물이 적은 편이다.

### 3) 연구 주제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독일 정치교육을 소개한 연구물이 가장 많다. 독일의 학교 및 사회 정치교육 제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연구들이다(박순영, 1982; 허영식, 1994, 1996a, 1996b; 박병석, 1996, 2004; 황병덕, 1997; 김영국, 1997; 윤재연, 1998; 김창환, 2001; 신두철, 2005; 임춘희, 2012). 둘째,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정치교육을 비교한 연구가 다음으로 많다. 서독과 남한의 정치교육을 비교하거나, 동서독의 정치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대부분은 서독과 남한의 정치교육을 비교한 연구이다(김미경, 2009). 셋째, 독일 정치교육이 한국 정치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구승희,



1996; 박광기, 2010). 한국의 연구자들은 독일 정치교육이 모범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 4) 연구의 특징

한국에서 진행된 독일 정치교육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다보니, 의미 분석, 심층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는 많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 독일 정치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는 많으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치교육 실시 방안(목적, 내용, 방법, 대상, 주체 등)에 대한 심층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치교육의 방향성 또는 모델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일부 시도되었으나,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단순 시사점을 넘어서 한국적 상황을 깊이 고려한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모델을 찾으려는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 2. 통일교육 관련 연구

### 1) 배경

정치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국가 정책에서 언제나 우선 순위였고,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한 분단국가였고, 우리와 비슷하게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였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교육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의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나는 통일 이전의 통일준비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통일대비교육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통일 후 사회통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점을 주목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독일은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치교육 안에서 동서독국민이 한 민족이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지침과 통일교육 내용 등이 한국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연구가 추진되었다(한만길 외, 1998; 김창환 외, 2002; 김상무, 2005; 강구섭, 2016).

독일통일은 한국의 통일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통일 이후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물들이 증가하였다. 특히, 내적통합 문제가 통일독일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연구물들이 급증하였다.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연구물들도 증가하였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 주민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의 남한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통일 이후 한국사회에서 맞게 될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2) 연구물 현황

통일 이전 실시된 서독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연구물 자체가 많지 않다. 진행된 연구물도 주로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통일교육 부분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사회통합은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은 분야이다. 그러나 통일교육 연구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연구물 자체가 많지 않다. 사회통합을 사회적 이슈로 파악하고 교육적 이슈로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일부 연구에서 주목받았을 뿐이다(한만길 외, 1998; 신혜진, 1999, 정영수 외, 1999).

### 3) 연구 주제

통일교육 관련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소개한 연구들이다. 주로 사회과 교육에서 실시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차원의 연구물이다(한국국토통일원, 1978; 이규영, 1997; 김창환 외, 2002; 김상무, 2005, 2009, 2010, 2011, 2013). 둘째,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추진되었다. 서독과 남한의 통일교육을 비교하거나, 동서독의 통일교육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박형영, 1982; 고숙희, 1999; 박봉정, 2002; 정용길, 2003; 김상무, 2005). 셋째, 독일 통일교육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박기석, 1998; 정상돈, 2000). 넷째, 더 나아가 한국 통일교육의 모델과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추진되었다(최현호, 1999; 신혜진, 1999; 김종남/채정민, 2008; 박광기, 2010).

### 4) 연구의 특징

한국의 통일연구는 기본적으로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 이전에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이 역시 통일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일 이후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연구는 드물다.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나, 남북통일 이후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 이후 정치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었으나, 과제도 발견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통일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은 미래적 사건이다.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방향에 대한 연구는 통일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연구하면서 바람직한 통일미래사회를 구상하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 이전도 중요하나,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통일준비 연구가 더욱 활발하다면, 앞으로는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 모델 개발 연구, 통일 청사진을 그리는 마스터플랜 연구와 액션 플랜 연구 등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의 구체적 모습으로 주목 받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사회통합교육 연구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표,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독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분단과 통일에 있어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모델이다. 통일에 대한 연구가 분야별, 시기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일·통합이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 진행된 통일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는 향후 남북이 통일될 때 매우 요긴





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 후 북한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계획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 재사회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교강사, 관리 기관 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남북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통일이 제도적인 통일인 동시에 사람의 통합으로 볼 때, 사람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사람의 통합은 생각, 가치관, 세계관, 삶의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합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한 역량에 관한 연구도 주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북한이탈 주민 연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통일을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분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여기서는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제1절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 후 한국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겪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독일통일이 예기치 않게 온 것과 같이 남북통일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통일 후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긴급조치, 잠정조치, 증장기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후 북한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동독지역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

다. 이는 통일 후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 작업이 대단히 큰 도전이요 과제라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은 70년 이상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공산주의체제에서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통일 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구동독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였고, 북한이탈 주민도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적 재사회화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 북한주민의식의 개조를 목표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 점을 간과하여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 후 정치교육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의 방향, 목표, 내용, 방법, 교강사, 인프라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분야별 액션플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강사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 공무원, 퇴직 교원, 북한이탈 주민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통일 후 사회통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독일 이상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교육도 중요하나, 남한주민의 통합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하다. 통일은 제도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후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한주민의 민주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육 받고 성장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억압과 물질적 궁핍 속

에서 피해해진 북한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약자인 북한주민들을 연대감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통일 후 벌어질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남한주민들이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역량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및 수용, 통일지향적 가치관과 통일인성 형성,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 등을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통해 함양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독일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독일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고찰하였다. 동서독의 통일 전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의 학교정치교육과 사회정치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통일을 보는 관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정치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통일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과 통일 이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통일을 보는 관점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변화하는 것뿐 아니라,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제도나 체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나, 상이한 의식과 문화를 통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 점은 독일통일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논의할 때,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견지할 필



요가 있다.

첫째, 통일을 제도적인 통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통일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상이한 체제(제도, 문화)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통일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영토와 제도가 통합되는 것이다. 정치제도, 경제제도, 국방제도 등 사회 전 분야의 상이한 제도가 하나로 통일(unification)되는 것으로, 이를 우리는 물리적인 통합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영역은, 사람의 의식과 문화가 통합되는 것이다. 이념, 가치관, 관습, 문화 등이 통합(integration)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화학적인 통합이라고 부른다.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물리적인 통합을 생각한다. 하나의 영토, 하나의 군대, 하나의 정치제도, 하나의 경제제도를 갖게 되면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일을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의식이 통합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으로 거듭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통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은 제도의 통일인 동시에 사람의 통합이다. 사회적 통합이란 남북한주민들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고, 이질성을 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8) 통일문제의 정치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

	정치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의 개념	통일(unification)	통합(integration)
통일에 대한 이해	목표(goal)	과정(process)
주 영역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주 관심사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합
통일 역량(추동체)	hard power	soft power
통일 미래상	통일국가	복지국가(삶의 질, 사회의 질)
통일교육 목표	통일역량	통합역량(문화역량, 사회역량, 시민역량)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 북한교육	평화교육, 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추진 주체	정부	민간(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등)

둘째, 통일을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통합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통일은 단기적으로 이룰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이 유출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의 통일 준비교육, 통일의 진행과정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단된 남북한 사회의 궁극적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통일은 외형적, 정치적 통일만이 아니라 둘로 갈라져 있는 민족사회의 실질적 통일, 실질적 융합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서로 달라져 있는 남북한주민의 의식, 가치관, 행동양식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현대 한국사 인식, 분단현실 인식, 통일의 당위성 인식 등 단기적 과제와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 장기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셋째, 남북한 사회통합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내적 통합 문제가 장기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남북한도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회통합이 통일 이후 정치교육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 2. 통일 이전부터 준비할 사항

###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가치관과 평화로운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독의 이러한 정치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일 대비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준다. 서독에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행해진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르쳐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은 통일 이후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독일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화하고, 상호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는 문화의 정착은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갈등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그 안에 원천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시민교육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2) 평화교육

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평화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독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서, 평화의 이념이 민주주의만큼 중요한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정치교육에서도 평화교육은 매우 강조되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공격성 등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정치교육의 내용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상호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 속에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건으로서 평화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통일의 과정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내다볼 때에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구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서도 통일 이후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3) 민족공동체 함양 교육

통일 전 서독은 비록 두 개의 나라이지만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기본지침에서 서독은 양 독일인들이 공통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동독에 대한 사실적 평가를 강조하였으며, 동독인들 또한 강렬한 통일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동서독 청년들 간의 연대감을 강조하였다. 이점은 통일 이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동서독을 엮는 끈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일민족 구성체로 존재해 왔다. 수천 년 동안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핏줄을 지닌 혈연 공동체였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민족적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다. 즉, 한 민족이라는 점은 한국사회 구성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 이후 비록 남북한이 다른 길을 갔지만, 동일민족이란 점은 남북 간의 이념 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하고, 남북한을 묶는 중요한 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가 민족주의임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민족의 이념은 한 핏줄로서 공통된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창출과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실현과 한민족 공동의 번영은 통일한국의 1차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서 민족공동체 교육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족의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통일대비교육의 수업방식은 ‘이질화의 사례집’ 수준을 뛰어 넘어 동질성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 이후 공동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적인 생활 수준과 생활 양식의 동질화 또는 균등화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신적인 통합, 정신상태 또는 의식의 내적인 통일도 중요한 과제인 바, 민족적인 연대의식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고하게 하는 데 남북의 동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 4) 남한주민과 학생의 통합역량 제고

통일 후 독일은 사회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통합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영토와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사회통

합, 사람과 의식 통합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전쟁으로 남북 상호 간 불신과 적대감이 심화되어 있고, 오랜 분단으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심리적 통합이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남한주민들의 포용능력과 갈등해결 능력도 미흡하여, 현재 남한 내 남남 갈등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주민 간의 이질감과 갈등, 반목과 대립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였을 때,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다. 모든 면에서 독일보다 험준한 상황이다. 동서독보다 남북 간의 분단기간이 더 길어 이질감이 더 크고,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치러 적대감이 더 강하고,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남북 간 교류가 거의 없어서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남한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낮고, 경제규모 격차가 더 커서 우열관계가 더 크게 형성되고, 사회정의, 포용성, 신뢰성 등 각종 사회의 질 수준이 낮아 사회통합과 공존과 갈등해결 면에서 독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사회통합 관련 한국과 독일 비교

비교 항목	독일	한국	영향
분단기간	1945-1990년(45년)	1945-2016년(71년)	이질감
상호 전쟁 경험	X	O	적대감
정치체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	부적응
상호 교류	O	X(거의 없음)	상호 이해
사회보장제도	O	△	사회적 안정성
통일 전 경제격차 (1인당 GDP)	2배	20배 이상	우열관계 (열등감)
사회정의(2011)	OECD 14위	OECD 25위	사회통합
포용성(2011)	OECD 14위	OECD 28위	공존
신뢰성(2011)	OECD 15위	OECD 25위	갈등해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구조, 사회 양극화를 지양하고 복지를 갖춘 구조, 공평하게 보상하되 기득권층의 승자 독식을 막는 구조, 다양한 성공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 사회공동체의 신뢰가 높은 구조 등 선진화된 사회구조가 마련될 때 북한주민들을 새로운 통일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다.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6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성장 모델 만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통일 후 사회통합을 이루기도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준을 보여주는 각종 사회적 지표는 OECD 국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표 1-10) 주요 사회지표

주요 사회지표 및 지수		미국	스웨덴	독일	한국	자료 출처
사회 지수	사회정의 지수	27	4	14	25	독일, 2011
	교육정의 지수	17	3	11	23	한국(KEDI, 2012)
사회 지표	사회적 신뢰도	22	3	19	21	OECD
	타인에 대한 신뢰도	21	4	15	25	OECD
	관용성 지수	9	11	14	28	OECD

북한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 공동

체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역량을 배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육 받고 성장한 북한주민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치적 억압과 물질적 궁핍 속에서 피폐해진 북한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약자인 북한주민들을 연대감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통일 후 벌어질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남한주민들이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선진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을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교육에 적극 투자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OECD-PISA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초중등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각종 교육지표(교육의 기회, 수월성, 형평성 등)가 개선되고 있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육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한국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뛰어나나, 사회적 역량, 시민 역량은 낮은 수준이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 협동력, 갈등해결능력 등 시민역량(공동체역량) 영역이 보통 또는 미흡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역량이 불충분한 수준인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학생들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학생들은 학업부적응, 생활부적응 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많은 북한이탈 학생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 학교부적응을 심화시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중도에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 북한이탈 학생들의 남한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볼 때, 남한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 포용역량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5)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2016 통일교육지침서’를 살펴보면, 현행 통일교육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는 통일교육의 주안점으로 1)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통일의지 확립, 2)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통일준비 역량 강화, 3)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4)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5)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6)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여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sup>88</sup>.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1) 통일문제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 환경의 이해, 4) 통일정책, 5) 통일을 위한 과제 등 다섯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지침서에 담겨져 있는 통일교육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이 통일준비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

<sup>88</sup>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6 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pp.8-11.

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을 준비하는 차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주로 지식을 매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강조되어 있으나,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무엇보다 역량을 키우는 관점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 통일교육은 통일 준비를 위한 지식과 가치관을 매개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역량을 키우는 것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일을 사회문화적 통합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통일교육에서는 통일준비교육뿐 아니라, 통합역량을 갖추는 교육도 중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남북 사회문화 통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통합이란 남북한주민들이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목표를 지식이나 체험과 더불어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두는 것이다. 통일역량과 더불어 통합역량을 갖추도록 통일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역량은 학생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통합역량을 갖추어 평화로운 통합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의 내용을 통일과 북한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갈등극복교육, 상호이해교육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통합역량은 공동체역량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의 방법을 '지식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직접 만나서 겪어보면서 통합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

한 이주민, 특히 탈북 학생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은 매우 중요하다.

표 1-1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 통일교육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점	통일준비	통일 이후 사회문화 통합
목표	지식, 체험	지식, 체험, 역량
대상	학생중심	전 국민
내용	통일이해, 북한이해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갈등극복교육, 상호이해교육
방법	지식중심	행위 중심

### 3. 통일 이후 강조할 사항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남북통일 이전에는 통일교육이 중요하지만, 남북통일 이후에는 정치교육과 통일교육(통합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초로 통일 이후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통일한국의 미래 디자인

우리가 꿈꾸는 통일을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동서독통일은 독일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 통일은 독일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동서독통일은 독일에 게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동서독통일은 결과적으로 동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유럽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왔다. 또한 동서독통일은 동서 유럽의 통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은 남북한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 등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갈등비용까지 합하면 그 비용은 막대하다.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은 인구 7,000만의 강대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이 2050년 미국에 뒤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89</sup>.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8만 6,000 달러로서 영국과 독일, 일본 등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sup>90</sup>. 통일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국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력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사회를 어떤 선진사회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미래 통일한국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통일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통일사회를 디자인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통일 이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향성

통일 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민주적인 사고와 행동을 매개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민주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통일교육)은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sup>89</sup>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21일 기사

<sup>90</sup> 아시아경제, 2014년 3월 11일 기사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사회통합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이 정치교육(통일교육)의 핵심 주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주민 간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여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치교육(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 북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드러나게 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해서 보충교육(숙제)을 받아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식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통일 이후의 정치교육(통일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민주시민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교육, 공산주의 가치관과 의식을 청산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 새로운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정치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 3)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

통일 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은 남북한 국민의 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그 기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체제(공산주의 이념)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다원적인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에 필요한 최적의 기회를 제

공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셋째, 민주적인 행동규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연습하고, 갈등해결능력과 합의를 도출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발생할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들과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을 해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인 선입견, 편견, 극단주의 등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일 후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 4)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

통일 후 남북한주민들이 갖추어야 하는 민주시민역량과 통합역량은 단순히 민주사회에 대한 지식만을 갖춘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더불어 경험, 기술, 태도, 행동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역량이 갖추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일 후 정치교육(통일교육)의 방법은 역량을 쌓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문제 중심의 접근법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방법을 가급적 북한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생활세계, 법체계,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등 북한주민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례증심의 접근법도 중요하다.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를 제시하고, 적응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사례집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영화, TV,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남북한주민 간의 만남과 대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주민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행사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생각, 가치관, 소망, 교육방식 등의 차이에 대하여 적극 토론하고, 이를 통해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5. 정치교육(통일교육) 담당 교원

통일 후 독일에서는 학교와 사회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독의 정치교육이 공산주의 이념교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정치교육을 가르치던 교원(강사)들은 전원 해고되거나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 후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 후 정치교육, 북한주민 재사회화 교육을 담당할 교·강사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교육을 담당할 교·강사를 교육시켜 자격증을 부여하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정치교육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 교원, 퇴직 공무원,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6) 정치교육(통일교육)의 주체

첫째, 독일의 경험에 기초하여 볼 때, 통일교육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동독주민들은 통일 초기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에 민감한 반

응을 보였고, 반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구동독주민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을 구동독의 강제 교화 및 선전의 일환으로 착각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 역시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통일교육)을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에서는 민간단체가 정치교육(통일교육)을 주도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간단체의 정치교육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을 교육시켜 통일 후 통일교육 지도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원’을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과 같이 정치교육(통일교육)을 주도할 기관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정치적인 재사회화는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통일 초기 정치사회화교육의 수요가 급증할 것임을 고려하여 단계별 통일교육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정치적 재사회화와 남한사회 적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원’을 통일 이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단체들과 연대하여 정치사회화교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자매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치사회화교육도 중요하다. 통일 후 남한의 시민단체, 각종 단체 및 협회,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북한의 자매기관과 협약을 맺고 정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동독 재건을 시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 7) 상황특수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

통일 직후 독일정부는 구서독의 제도를 구동독지역에 속히 이식하면 사회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회통일교육 역시 구서독식의 방법



을 동독지역에 적용하면, 민주시민의식 제고와 통일국민 의식함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오랜 기간 동안 동서독 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점은 독일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통일교육은 그것이 실시되는 고유한 정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정치행위는 ‘지금’과 ‘여기’라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통일교육은 이러한 특정한 정치적인 조건을 기초로 구상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 후 구동독지역 통일교육은 이러한 상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 서독의 우수한 정치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여와 동독에 적용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치 불신과 극단적 정치행태를 초래하였고, 동서독주민의 의식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 8) 중심적 통일교육기관

독일에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담당기관이 존재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통일교육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통일교육을 일정한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이후 독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 준비 및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국민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고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지역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 등 정치교육기관은 통일 이후에 더욱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과 통일준비교육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였지만, 통일 이후에도 정치교육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통일 이전에는 정치교육에 관심 있

는 사람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요 목표 그룹이 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통일독일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정치교육센터뿐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도 통일 후 정치교육을 담당할 기구나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치교육과 통합교육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주무 통일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구섭(2016). 한국 통일교육의 현황과 독일 사례의 시사점.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pp.55-67.
- 고숙희(1999).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통일 전 서독과 남한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모·홍영환(2002). 통일 이후의 시민성 교육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pp.25-44.
- 김경웅(1982). 정치교육론-정치교육의 발전과 전망. 유풍출판사
- 김기봉(2014).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VS. 역사를 통한 통일교육.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pp.279-306.
- 김명철(1994). 통일 후의 북한주민교육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pp.33-64.
- 김미경(2011). 정치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과정 연구: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무(2005). 통일독일의 동독사 이해와 동독사교육에 관한 논의가 남한의 북한이해교육에 주는 시사점.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pp.29-43.
- 김상무(2005). 통일독일의 통일교육 권고안과 서독의 통일교육 지침 비교 연구.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권, 제1호, pp.1-19.
- 김상무(2009). 통일독일 학교교육의 내적통일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15권, 제3호, pp.35-57.
- 김상무(2010). 1978년 서독 통일교육지침 결정 이후 중등 역사교과서의 동서독 서술 비교 연구.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5권, 제3호, pp.27-52.
- 김상무(2011). 통일독일의 분단사 및 분단사교육 논의가 한국의 분단사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pp.1-23.
- 김상무(2013). 내적통일 관점에서의 독일통일 이후 중등 역사 교과서의 동독사 서술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pp.105-149.
- 김영국(1997). 통일독일의 정치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6권, pp.277-298.
- 김유경(2010). 독일연방공화국 중등학교 역사교육에서의 전후 현대사: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서독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학회. 역사학보, 제205호, pp.119-156.
- 김종남·채정민(2008).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14권, 제15호, pp.519-544.
- 김주성(1994).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시민교육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5권, 통일원.
- 김창환(2000). 독일통일 10주년과 그 교훈. 교육개발. 2000년 가을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2001). 독일의 정치교육제도와 운영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 김창환(2008).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신정.
- 김창환(2016). 독일 정치교육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23-133.
-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 문용린 외(199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박광기(2010). 독일의 정치교육을 통해 본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 정립.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pp.105-130.
- 박기석(1998).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독일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석(1996). 정치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통일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6호, pp.239-263.
- 박병석(2004).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서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 박봉정(2002). 한국과 독일의 학교 통일교육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영(1981). 서독의 정치교육.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제12권, 제1호, pp.121-152.
- 박재윤·백성준(1992).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 박찬석(1999). 학교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집, 제1호, pp.185-204.
- 손기웅 외(2009).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 평가.
- 신두철(2005). 독일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1호, pp.41-57.
- 신세호 외(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신혜진(1999). 통일한국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과 통일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일환(1995).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pp.523-548.
- 원준호·차조일(2014). 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과에 대한 연구: 교육목적과 체계, 교육내용,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pp.227-256.
- 윤재연(1998). 독일 정치교육 분석: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영(1997). 독일 통일교육 연구.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시아, 제4권, 제4호, pp.60-87.
- 이규영(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이병련(1999). 독일통일과 동독 역사교육의 몰락.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사총, pp.139-163.
- 이병련(2000).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역사교육.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통권 제50호, pp.217-235.
- 이완호(2011). 독일통일을 활용한 수업 모형 연구.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제52집, pp.175-197.
- 임춘희(2012).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청소년 정치교육.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득주 외(1992). 현대민주시민교육론. 평민사.
- 전득주 외(1995). 독일연방공화국-정치교육, 민주화 그리고 통일. 대왕사.



- 전득주 외(2000).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한국, 대만, 독일,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유평출판사.
- 전득주·페터마싱·허영식 편(2006).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엠-에드.
- 정병기(2010). 독일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 진보평론. 제46호(2010년 겨울).
- 정용길(2003).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 비교.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5권. 제2호. pp.295-313.
- 정은찬(2016). 북한의 정치사상교육과 주민의식.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30-40.
- 주독대사관(1992). 독일통일 2주년 중간 결산.
- 최의철(2000).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 최현호(1999).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1호. pp.267-292.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2016 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 통일원(1994). 독일통일백서.
- 통일원(1994).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허영식(1994). 독일의 통일과 이에 비추어 본 정치교육. 한국청소년개발원.
- 허영식(1996). 민주시민교육론-독일 정치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배영사.
- 허영식(1996). 사회적 전망 취득과 정치 교육: 동서독 청소년의 상호 이해를 위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23권. pp.137-159.
- 황병덕(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 황병덕(1997). 독일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을 위한 시사점 도출.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제5권. 제1호. pp.87-111.

### 〈외국 문헌〉

-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K der SED(1984-1989). Staatsbürgerkunde - Klasse 7-10, Berlin, 1984-1989.*
- Anweiler, O.(1988).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 Baske, S.(Hrsg.)(1979).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 Beyer, H.-J.(1996). Die Generation der Vereinig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 Böhnisch, L., u.a.(1992). Gesellungsstudie, Dresden.*
- Brähler, E., Richter, H.-E.(1995). Deutsche Befindlichkeiten im Ost-West-Vergl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0-41/1995.*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1993).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82).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 Schule, Bonn.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85–1999). *Tätigkeitsbericht 1985–1999*, Bonn.
- Crome, E., Muszynski, B.(2000). *Politikbedingungen und politische Bildung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5(2000.6.16).
- Deutsches Jugendinstitut(1992).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 Döbert, H.(1995). *Das Bildungswesen der DDR in Stichworten*, Neuwied.
- Dorst, W.(1953). *Die polytechnische Bildun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Schule*, 1953.
- Eckhard Ruminski(2012). *독일통일 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2호, pp.109–120.
- Emmerling, E.(1958). *50 Jahre VHS in Deutschland.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Berlin.
- Empfehlung zur Ostkunde.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3.12.1956*. Hessisches Institut für Bildungsplanung und Schulentwicklung(Hrsg.)(1979). *Politische Bildung in Hessen. Sammlung rechtlicher Regelungen und Empfehlung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aus den Jahren 1956 bis 1979*.
- Faulenbach, Bernd(2016). *Politische Bild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 Zur Rolle der parteinahen Stiftunge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11–122.
- Feige, W., u. a.(1980). *Unterrichtshilfen Staatsbürgerkunde, Ost–Berlin*.
- Förster, P., Friedrich, W.(1996).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9/1996.
- Freiwald, H., u.a.(1973). *Das Deutschlandproblem in Schulbüchern der Bundesrepublik*, Düsseldorf.
- Freya, K.(1990). *Lüg Vaterland*, München.
- Fuchs, H. W., Reuter, L. 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 Geißler, R.(2000). *Nachholende Modernisierung mit Widersprüchen – Eine Vereinigungsbilanz aus modernisierungstheoretischer Perspektiv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Geulen, D.(1998).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Opladen.
- Glaab, M.(1996).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78–188.

- Glatzer, W., Ostner, I.(1999). *Deutschland im Wandel*, Opladen.
- Golz, H.-G.(2000). *Verlorene Generation Ost? – Jugend in Ostdeutschland zehn Jahre nach der Vereinigung*, W. Thierse, I. Spittmann-Rühle, J. L. Kuppe(Hrsg.),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 Hafemann, H.(1993). *Von der Schwierigkeit, Demokratie und Selbstorganisation einzüben – Erfahrungen im Aufbauprozess des Landesjugendrings Thüringen*, *Zf-Päd*, 30. Beiheft, 1993, 283–297.
- Huettmann, Jens(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9–16.
- Klein, H.(1974). *Bildung in der DDR – Grundlagen, Entwicklungen, Probleme*, Hamburg.
- Knoll, J. H., Siebert, H.(1968). *Erwachsenenbildung – Erwachsenenqualifizierung*, Heidelberg.
- Krueger, Thomas(2016). *Besonderheit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Ostdeutschland*,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92–98.
- Kuppe, J.(1996). *Deutschlandpolitik der DDR*, W. Weidenfeld, K.-R.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0–204.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Hrsg.)(1982).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Stuttgart.
-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1984). *Politische Bildung in Baden-Württemberg. Einrichtungen und Aktivitäten*, Stuttgart.
- Lindner, W., u. a.(1971). *Ziel, Inhalt, Methoden, Organisationsformen und Mittel der sozialistischen Erziehung*, *Pädagogik*, 9(1971).
- Mietzner, U.(1998). *Enteignung der Subjekte – Lehrer und Schule in der DDR*, Opladen.
- Ministeriat der DDR, Ministerium für Volksbildung(1988). *Lehrpla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 Staatsbürgerkunde, Volk und Wissen*.
-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Hrsg.)(1994). *Vorläufiger Rahmenplan des Landes Brandenburg: Politische Bildung*, Potsdam.
-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 Neuner, G.(1973). *Zur Theorie der sozialistischen Allgemeinbildung*, Berlin.
-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Hrsg.)(1970). *Allgemeine Richtlinien und Richtlinien für den Unterricht in den Fächern Erdkunde, Geschichte, Sozial- und Gem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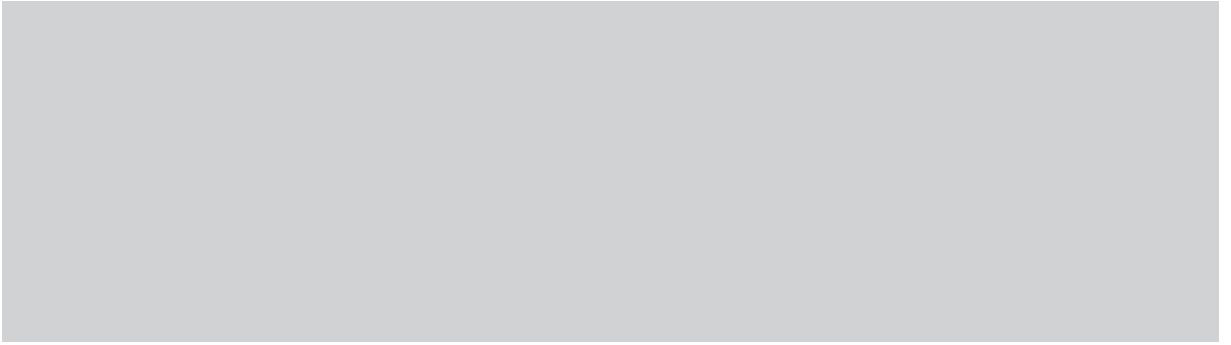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 schaftskunde, Hannover.
- Niehuis, E.(1973). *Analys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r BRD und der DDR*, Heidelberg.
- Olbrich, J.(2001).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 in Deutschland*, Bonn.
- Papst, M., Schuster, D.(1993).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 Pöggeler, F.(1992).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 Pollack, D.(2000).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2000,9,22).
- Sander, W.(Hrsg.)(1999). *Handbuch Politische Bildung*, Schwalbach.
- Schlegel, U., Förster, P.(Hrsg.)(1997). *Ostdeutsche Jugendliche*, Opladen.
- Schmidtchen, G.(1997). *Wie weit ist der Weg nach Deutschland? – Sozialpsychologie der Jugend in der postsozialistischen Welt*, Opladen.
- Seliger, B.(2009). *독일통일 20년-정치·사회·경제적 결산.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 Spittmann, I.(1995). *Fünf Jahre danach – Wieviel Einheit brauchen wi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8/1995.
- Statistisches Bundesamt(2010). *20 Jahre Deutsche Einheit*.
- Statistisches Landesamt Berlin(2000). *Berliner Statistik 2000*.
- Strohschneider, S.(Hrsg.)(1996). *Denken in Deutschland – Vergleichende Untersuchungen in Ost und West*, Bern.
- Sturzbecher, D., Kalb, K.(1993). *Elterliche Erziehungsziele in der ehemaligen DDR und der alten Bundesrepublik.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0(1993), 143-147.
- Sußmann, R.(1985).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Langfristige Wirkungen*, Opladen.
- Thierse, W., u.a.(Hrsg.)(2000). *Zehn Jahre Deutsche Einheit*, Bonn.
- Ulshöfer, R., Götz, Th.(Hrsg.)(1975). *Politische Bildung – Ein Auftrag aller Fächer*, Freiburg.
- Veen, H.-J.(1999). *Juge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ihr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im Vereinigungsprozeß*, *Deutscher Bundestag(Hrsg.)*,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Bd.III/3, Baden-Baden, 2394-2448p.
- Vollbrecht, R.(1993).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Opladen.
- Weidenfeld, W., Korte, K.-R.(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Weisseno, Georg(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vor 1990*,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3-28.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정책문서를 통해 본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 들어가며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와 민주적 정치문화를 필요로 한다. 민주적 정치문화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의지와 능력,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민주적 시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서도 국민들이 처음부터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배움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당시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지사였고, 1999년에서 2004년까지 독일 대통령을 역임한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가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와 그에 속한 시민을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자유적 민주주의는 민주시민교육이 없이는 붕괴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분단시기에 이미 서독은 민주시민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 알려져 있었다. 서독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과 각 연방주에 설치된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은 유럽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기구였다. 그리고 연방의회에 진출한 각종 정당들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재단들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재단과 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형식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서독의 시민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매일 수많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주

목할 사실은 통일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제도가 그대로 신연방지역에도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업교육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서독에는 분단시기에 이미 장기실업자를 위한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직업교육과 재교육 시스템이 존재했다. 직업재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은 일반적인 직업교육 기간과 동일하여 3년에서 3년 반이며 이를 이수하면 각종 직업협회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고, 이러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은 사설 훈련기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은 노동청, 군대 또는 보험기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창출조치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정부문서를 통해서 보면 통일 이전부터 이미 동독의 개혁정부가 서독과 동일한 방식의 민주시민교육과 직업교육제도를 동독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 민주시민교육의 정착

### 제1절 서독의 민주시민교육과 동독의 국가시민교육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독에서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동독에서 ‘국가시민교육’으로 불리던 정치교육 과목의 개혁을 통해 서독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동독의 학교에도 정착시키는 것이 그 목표였다.<sup>1</sup> 즉, 동독체제 개혁은 정치교육의 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독에 이렇게 이른 시기에 정치교육의 개혁 작업이 시작되고 그것이 정착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정치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2</sup>

<sup>1</sup> 동독 ‘국가시민’ 교과재 정비에 관해-츠빅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문서번호 1),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 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문서번호 2),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문서번호 3).

<sup>2</sup> 여기서 독일의 정치교육전통과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해 서술하는 두 챕터는 필자가 2007년에 Korean Perspective에 발표한 논문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독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pp.132-149.

## 1.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전통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치교육의 기원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각 지역을 분할지배하던 제후들은 초기 계몽사상을 통해 싹트던 혁명적 사상들로부터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sup>3</sup> 19세기에 독일이 통일제국을 이루었을 때에도 정치교육의 목적은 여전히 혁명적 사상, 즉 당시 급속히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확산을 막는데 있었다. 1889년 빌헬름 2세는 ‘국가시민교육(staatsbuergerliche Unterricht)’의 도입을 통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4</sup>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교육의 성격은 노동운동의 이념 확산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그때까지의 정치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었다. 이 시기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단체들이 각자의 정치이념을 홍보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기제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이 시기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헤르만 헬러(Hermann Heller)와 같은 학자들이 시민대학운동을 제창하고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교양을 쌓을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시민대학운동 외에도 노동조합, 청소년 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이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919년에 ‘향토봉사 제국센터(Reichszentrale fuer Heimatdienst)’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전신은 1918년 3월 1일에 성립

<sup>3</sup> Kuhn, Hans-Werner; Massing, Peter; Skuhr, Werner(편):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Entwicklung Stand Perspektiven(독일의 정치교육, 발전, 현재, 전망). Opladen 1993, p.13; Röhrig, Paul: Politische Bildung. Herkunft und Aufgabe(정치교육, 기원과 과제). Stuttgart 1964, p.39 참조.

<sup>4</sup> Kuhn; Massing; Skuhr(편): Politische Bildung, p.35.



된 ‘향토봉사 중앙센터(Zentralstelle fuer Heimatdienst)’였다. 이 기구는 제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종결되어가던 시기에 국민들의 저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민들에게 민주적 의식과 새로운 헌법체계를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이 기구를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국민의 민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국가의 제도와 기구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여 민주주의로의 교육이 아닌 ‘국가로의 교육’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비판은 분명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기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으로 인해 독일영토에서 분리되었던 동쪽 영토에 사는 구독일지역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독일영토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복귀를 찬성하도록 선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기구의 역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실패로 몰아간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였다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히틀러의 제3제국, 즉 우리가 흔히 나치제국이라고 말하는 해당 시기의 정치교육은 나치의 정치이념을 국민에 주입시키고, 그를 통해 국민동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당시 독일국민들이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하였는가 혹은 오히려 그에 동조하였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구의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었다, 이 논의는 지금도 진행되는 논의이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sup>5</sup> 그것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콘텍스트에서 문제를 고찰한다고 해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sup>5</sup> Daniel Goldhagen의 책 『히틀러의 추종자들』의 발표 이후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역사논쟁이 그 한 예이다.

## 2. 서독의 민주시민교육

1945년 나치가 패망한 후 3년 간의 연합군 점령기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 두 개의 국가가 독일영토에 건국되던 때, 민주주의체제가 성립되고 있던 서독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이 새로운 엘리트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테오도르 에셴베르크(Theodor Eschenberg)와 아놀드 베르크슈트라스(Arnold Bergstrasser) 같은 정치학자들이 나서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들은 스스로 정치교육협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정치교육 운동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sup>6</sup> 그리고 각 정당과 정치재단, 노조 그리고 교회와 시민단체들도 정치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일시민들은 1950년대에 이미 다양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육이라는 과제의 중요성과 광범위한 담당영역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52년에 국가기구로서 내무부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의 전신인 ‘향토봉사 연방센터(Bundeszentrale fuer Heimatdienst)’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 기구의 탄생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향토봉사 중앙센터’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더욱이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이 기구는 민주주의 수호기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부들이 나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독에 새로이 구성된 정치교육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더욱이 1958년 건립된 정치교육원 동방학교(Ost-Kolleg der Bundeszentrale fuer Heimatdienst)의 경우 나치체제와의 협력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았다.

<sup>6</sup> Siegfried Schiele, ‘Ein halbes Jahrhundert staatlich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독일 국가의 정치교육 반세기)’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2004년 2월 16일 7-8호에 수록.



1960년대 서베를린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전개된 서독의 학생운동은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저항이었다. 전후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세대는 나치시대에 무엇을 하였는가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나치에 대한 침묵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서독사회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을 겪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연방정치교육원과 서독 연방주들의 주정치교육원의 성격도 점차 변화되었다. 1963년에 ‘향토봉사 연방센터’가 ‘연방정치교육원’이라고 개칭되었고, 1973년 10월 연수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파울 프랑켄(Paul Franken)이 정년퇴임한 후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 Dietrich Genscher)가 연방의회에 진출한 기민당/기사당(CDU/CSU), 사민당(SPD) 그리고 자민당(FDP) 세 정당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수원 원장단(Direktorium)을 구성하면서 서독의 연방정치교육원은 다원화되는 사회적 변동을 반영하는 민주적 기구로 새로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이 서독 연방정치교육원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물론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내무부 산하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세계대전 이전부터 오랫동안 활동해 온 수많은 사회단체와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과 함께 시민대학을 통해 행해진 정치교육 프로그램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오랜 정치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정치교육 방법과 그 내용 그리고 정치교육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들의 오랜 경험을 근거로 고유의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정치교육의 정의와 그 방법론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교육의 담당자들의 정치적 이념이 극렬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꼭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라는 남부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걷는 학자

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최소한의 합의점이 현재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chsbacher Konsens)’라고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독일의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민주시민교육에서 주입식 교육 또는 일방적인 강요 또는 교화하는 교육을 금지한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세뇌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치적 세뇌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고자 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에 반작용한다. 2.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점들은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을 받는 학생과 시민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존의 정치 상황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sup>7</sup> 이러한 합의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민주시민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지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합의로 인해 정치재단이 행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기본적인 가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활동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논쟁점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신중한 자기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었다.

토마스 마이어(Thomas Meyer)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독

.....  
<sup>7</sup> Wolfgang Sander, Beutelsbacher Konsens, Georg Weißeno, (편): Lexikon der politischen Bildung, , Schwalbach 1999/2000 2권, pp.31-32.





일의 민주시민교육이 내적인 다원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sup>8</sup> 그는 이 점을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큰 강점이라고 본다. 그러한 내적 다원성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은 산업화된 현대 대중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 1960년대 이래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러한 내적 다원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치체제 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서독이 유럽과 세계무대에서 과거청산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통일 전부터 서독에서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였다. 이들 단체의 성격은 아주 다양하여, 특정 사회집단의 문제만을 다루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체도 있고, 일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이 존재한다. 독일의 연방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과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정치재단들도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재단이라는 기구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기구이다. 그 외에도 교회 또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북부독일의 로쿰(Loccum), 남부독일의 튜징(Tuzing) 그리고 뮐하임(Muehlheim)과 같은 도시에 설치된 기독교 아카데미(Evangelische Akademie)들은 연중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이 프로그램의 결과들을 모아서 출간되는 저작들이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자주 인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각 지역의 시민대학들도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래의 <표 2-1>은 서독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활동과 재정적 기반을 총괄적으로 보여준다.

.....  
<sup>8</sup> 이하 이은정, 2007년 3월 21일 경희대 NGO대학원 특별강의 참조.

표 2-1) 통일 전 서독 민주시민교육 현황

담당기관/단체	활동 유형	재정적 기반
연방, 각 주 정치교육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교사연수, 교재개발) 민주시민교육 단체 지원 및 교재개발 자체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내무부
4개 정치재단	포럼 세미나 역량강화 훈련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시민대학 세미나	자체
교회	세미나	자체
노조	세미나	자체
정당	세미나	자체
신문, 기업	포럼	자체

### 3. ‘국가시민교육’ 수업의 개혁을 둘러싼 동독정부 내의 논의

동독은 1945년 승전연합국에 의한 분할점령으로 소련군 점령지역이 되었다가 1949년 독일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건국된 국가였다. 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이 지역이 소련군 점령지역이었던 194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국가시민교육 수업이 진행되었다. 정치교육 과목이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은 동독과 서독 간에 차이가 없었다.

동유럽 여러 국가에서 개혁이 가시화되고 동독주민들이 대거 동유럽 국가들을 통해 서방으로 탈출하거나 동유럽 주재 서독의 대사관을 점령하고 이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던 1989년 여름, 동독에서는 정치교육 수업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1월 10일에 츠빅кау 교육대학 국가시민교과방법론학과의 교수들이 동독체제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가 시민교육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한다.<sup>9</sup> 그들은 개혁된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가시민 교과와 명칭을 사회 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었다.

1989년 11월 16일에 동독의 교육부도 국가시민교육은 앞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담당할 시민을 교육하는 과목이라고 규정하고 동독의 학생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수업을 지속할 것을 권하였다.<sup>10</sup> 11월 18일에 한스 모드로우가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하고 난 후인 11월 29일에 동독 교육부는 국가시민교육은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sup>11</sup> 그러나 1990년 2월 21일에 동독 교육부는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사회과목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이 도입될 사회과목을 담당할 교원은 사회과목을 전공했거나 그와 관련된 연수 등을 통해 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를 위해 동서독 간의 교원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산하 교사 및 유치원교사 계속교육 중앙연구소(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가 사회 교과 담당 교원들의 계속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90년 3월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하는 11학년과 12학년의 철학수업에 관한 권고사항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 수업의 목

.....

<sup>9</sup> 동독 '국가시민' 교과와 재정비에 관해-츠빅кау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문서번호 1).

<sup>10</sup>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문서번호 2).

<sup>11</sup>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문서번호 3).

표이며, 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수방법과 수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된다고 발표하였다.<sup>12</sup> 새로이 도입된 사회과목의 수업 목표와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과내용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변 환경에 관한 주제와 전 지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3</sup>

통일 직전인 1990년 9월 27일에 동독 교육부의 정치교육 프로젝트 그룹이 작성, 제출한 권고안에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는 것이며, 이런 내용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시간의 사회과목 수업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4</sup>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해야 하며, 전문가와 교육학자, 담당교사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서 각 연방주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동독지역의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하며, 사회과목 담당 교사의 교육은 사회과학, 전문적인 교수방법론 및 교육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학위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통일 당시에는 이런 복합적인 교직과정이 동독의 대학에 존재하지 않고,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독지역 대학들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한다고 하였다.<sup>15</sup>

.....  
<sup>12</sup>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문서번호 7).

<sup>13</sup>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문서번호 8).

<sup>14</sup>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문서번호 17).

<sup>15</sup>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문서번호 17).



## 제2절 통일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통일과 함께 발족한 신연방주의 교육부들은 모두 중등교육의 사회과목 개편을 위한 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발표하였다.<sup>16</sup> 그 목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사회과목의 수업을 통해 사회적이자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만 한다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는 설명하였다.<sup>17</sup>

통일된 독일의 신연방지역 주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교육보다 성인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중요한 비중을 두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각 주 단위의 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통일 직후부터 주총리실에 임시적인 ‘정치교육’ 위원회를 도입했고 1992년 7월에 주정치교육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sup>18</sup>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은 설립단계에서 주정부의 자매결연 파트너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정치교육원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았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통일 직후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1994년에 주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 1인당 2.6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참고로 1994년에 연방정치교육원은 주민 1인당 0.92 마르크

.....  
<sup>16</su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교과: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4),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교과: 중등학교 중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5), 튀링겐주 내 사회 교과: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6).  
<sup>17</su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교과: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24).  
<sup>18</sup>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첫 10년(문서번호 60).

크, 베를린은 0.82 마르크, 작센주는 0.34 마르크를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지출한 것과, 동 연방주가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화해’에 초점을 맞춘 브란덴부르크주만의 특별한 길을 선언하고 공공부문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거의 해고하지 않았던 정책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과거청산정책을 엄격하게 추진한 작센주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주민 1인당 지출한 비용이 브란덴부르크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는 것은 이 두 사안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동독시절 당에 의해 행해진 정치교육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은 이전의 정치교육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대하였다. 현재 신연방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독일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비어와 크레머는 설명한다.<sup>19</sup> 이 점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부터 교육요원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통일 논의에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에는 1945년 종전 이후 서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신연방주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받아들이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결과적으로 신연방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꿈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sup>19</sup> Wolfgang Beer/ Will Cremer, Die Traeger ausserschulischer politischer Bildung(학교 외 정치교육 담당자), Wolfgang Beer u.a. (편), Handbuch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성인정치교육 사전), Schwalbach 1999, 111-143, p.126.



중반 신연방 각 지역에 기승을 부리던 극우 나치세력은 오랫동안 과거청산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독일의 정치가와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지속되는 외국인에 대한 테러, 도심 곳곳에 등장한 반유대주의적 낙서, 나치의 미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져 갔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실제로 민주 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는 민주시민교육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서야 민주시민교육을 찾거나 마치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를 하룻밤 사이에 치유할 수 있는 ‘소방수’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한다.<sup>20</sup> 1990년 중반 이후 등장한 신연방지역의 극우 나치세력의 문제를 대하는 정치가들의 태도가 이러한 지적이 정확한 관찰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독일의 통일이 구동독지역이 신연방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 대부분의 서독의 제도들이 신연방주에 그대로 이전되게 되었다.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체계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는 신연방지역에는 서독에서와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주에 정치교육원을 설립하였지만 그 기관이 지원해 줄 민간단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직후 신연방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정치재단, 교회, 노조 등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독의 구조를 이전하고 프로그램 구성하였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신연방지역에서 통일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독일의

.....  
<sup>20</sup> 위의 논문 p.126.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활동가들의 창의력과 인내 그리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연방지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체계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국가가 민주시민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더욱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유급의 교육휴가(Bildungsurlaub)를 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는 독일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나오는 것이 학교 외의 민주시민교육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활동가들이 보면 마치 꿈과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 패전 후 승전 연합국들이 가져다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비교적 성공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기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기관은 연방정치교육원과 6개의 정치재단의 역할이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연방정치교육원은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일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이며, 정치재단 역시 독일 정치제도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장치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 내무부에 속한 국가기관으로 각 주에 설립된 주연수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과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들은 일종의 민주시민교육 보조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치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 담당 단체들의 다양성과 그 교육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돕고 정치교육의 목적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정치교육원의 설립 규정에 쓰여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과 구조를 보면 연수원의 원장과 사무처 외에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학술자문단과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있다. 이 감독위원회는 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시·보장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교육원의 예산, 사업계획, 활동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학술자문단이 제시하는 의견이나 다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현재 감독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총 22명이며 기민당과 사민당 소속이 각 8명 그리고 자민당, 녹색당, 좌파연합 소속이 각 2명이다. 감독위원회의 회장은 제1정당에서, 부회장은 제2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학술자문단은 총 인원이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방정부의 내무부장관이 그 구성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자문위원은 한번 연임이 가능하며 자문단이 새로운 구성원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새로운 자문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치교육원의 현재 조직은 총무행정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Z국(Abteilung Z)과 전문주제를 담당하는 전문국 그리고 원장 직속의 기획실과 전문국장 직속의 2개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그룹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사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수가 변화될 수도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1990년대 이후 1,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의 60%를 민간단체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만을 자체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여 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방정치교육원이 독일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자체활동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재개발과 출판활동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는 연방정치교육원의 출판물들은

독일 현대 역사, 사회, 정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접근하여 성인교육과 학교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의회(Das Parlament)’라는 신문과 그 신문의 부록으로 매주 발행되는 ‘정치와 현대 역사로부터(Aus der Politik und Zeitgeschichte)’와 같은 출판물은 대중성과 고급 정치비평 그리고 학술적인 분석을 잘 조화시킨 수준 높은 출판물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출판활동 외에 세미나, 답사, 전시회, 경연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조직할뿐만 아니라 언론인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활동의 목적이 ‘시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데 있다고 연방정치교육원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재적 지배체제를 경험한 독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관용 등의 가치와 책임감을 국민들의 의식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만 한다”<sup>21</sup>라는 것이다.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말은 과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독일사회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시대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전후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종전된 지 반세기도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이 나치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종종 젊은 세대와 보수 세력에 의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를 범법을 저지르는 것과 같이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물론 정치재단의 활동도 포함된다.

.....  
<sup>21</sup>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bpb.de>



정치재단이라는 것이 독일에만 있는 특수한 조직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당의 부속조직이 아니다. 물론 정당과 정치재단이 정치 이념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정치재단과 정당은 조직과 재정적인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단체이며, 정치재단의 예산은 내무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6개의 정치재단에 지불되는 연간 예산의 총액은 약 4,500 억원이다. 각 재단은 그들이 연계되어 있는 정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의거해서 예산을 배분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재단은 재정문제에 있어서 연방회계청(Bundesrechnungshof)의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정치재단은 직접적으로 정당을 돕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연방행정원(Bundesverwaltungsamt)은 수시로 정치재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만일 정치재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을 지원한 것이 발견되면 해당 정치재단은 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만 할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재단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치재단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재단들은 직접적으로 정당을 돕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매우 큰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정치재단은 현재 한국의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정당연구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의 정치재단은 총 6개로 프리드리히 에버르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아테나우어 재단(Adenauer-Stiftung), 한스 자이델 재단(Hans-Seidel-Stiftung),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Naumann-Stiftung),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oell-Stiftung),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Luxemburg-stiftung)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사민당,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녹색당 그리고 좌파연합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부서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2) 통일된 독일의 정치재단

재단	설립년도	연계정당
프리드리히 에버르트 재단 (Friedrich Eber Stiftung)	1925(1949 재건립)	사회민주당(SPD)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1958	자유민주당(FDP)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1964	기독교민주당(CDU)
한스 자이델 재단 (Hans Seidel Stiftung)	1967	기독교사회당(CSU)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ell Stiftung)	1997(전신 무지개 재단연합 1988 건립 )	녹색당(Gruen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1992	좌파연합(Die Linke)

정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정당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정당의 경우 교육의 대상이 당원과 당의 상근직원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로 제한된 반면 정치재단은 특정한 당원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정치재단이 정당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금지하는 법규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재단이 그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 원내교섭단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이 그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재단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노선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분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독일의 현대사회에서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본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정당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가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들과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정당의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국가가 왜 그런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재단들의 교육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거기에는 세미나와 학습프로젝트와 같은 기존의 교육형태도 포함되지만 역량강화 훈련, 정치자문 그리고 포럼과 같은 장을 마련해 정치와 정책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활동도 속한다. 이들을 다시 자세히 보면 세미나와 학습프로젝트에서는 보다 확대된 시간과 다양한 교수방법론적 구조를 기반으로 학습을 조직하여 시민들의 사고방식, 지식, 행동의지와 민주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강화훈련에서는 참여자들이 집중적인 학습과 연습과정을 통해 의사전달과 경영의 기본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포럼과 같은 장을 마련하여 정치와 정책을 전달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사회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정치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자문의 목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정능력과 행동능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활동은 독일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실제 한편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지키면서 정당과 조직적으로 독립된 채 정치적 이념만을 공유하는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기본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균형을 찾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직업교육-계속교육/재교육

독일통일과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그들 중 근로연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 재교육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빨리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재교육과 실직 간의 악순환 고리가 생성되었고, 이런 프로그램 덕에 가시적인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용되었다는 사실은 정책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의 문제가 통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일 이전에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되고 있다.

1990년 초에 동독 노동부가 작성한 문서는 동독경제가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1990년 1월 31일까지 이미 145,030명의 노동력이 해고되었다고 한다.<sup>22</sup> 그중에서 3분의 2만이 다시 직장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문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동베를린지역의 노동현황에 관한 설명이다. 당시 동베를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19,592명이며 이들이 대

<sup>22</sup> 동독내각회의 의결안-노동력의 [분야별] 조정 및 노동력 재교육 조치의 현황에 대해(문서번호 5).

부분 전문직 대학졸업자로 분류되는 그룹에 속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에 속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동베를린에는 1,968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동독 개혁내각 1기의 노동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전국적으로 일자리와 노동력의 균등한 배포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방출(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배정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들이 직업전환교육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배정될 수 있는 직장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동독에서도 이미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에게 계속교육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이수한 후에 당연히 새로운 직장을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통일된 독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것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일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sup>23</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일조약 8장 37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수료증 및 능력증명이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동독체제 하에서 인민소유산업체(VEI)에 소속되었던 마이스터("VE"-Meister)들이 통일 후에 자영업적 제조업자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증(Berufsausbildung)과 장인자격증(Meisterausbildung)은 개별적인 심사 없이 서독에서

<sup>23</sup>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말에 총 1,040,853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였다. 그중 213,127명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827,726명은 직업교육훈련 이수였다. 후자 중 38,477명은 대학졸업자였고 7,891명은 전문대졸업자, 그리고 65,780명은 전문학교졸업자였다(문서번호 44).

취득한 자격증과 동일하게 인정받았다. 동독에서 취득 가능한 전문자격증에 상응하는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이 서독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야 했다.<sup>24</sup> 베를린시의 경우 개인이 동독에서 취득한 일반적인 직업자격증의 동등성 확인을 요구할 경우 서류심사 비용으로 40 유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인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비서자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비용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심사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는 신분증과 주거증명, 전문직 자격증, 장인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명서 등이며, 주거지역의 관할 관청 직업훈련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신청을 할 수 있었다.<sup>25</sup>

분단시기에 동독과 서독에서는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를 졸업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이 근로인력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을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사업체가 정한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생(Auszubildende)을 위한 자리가 정해졌었다.<sup>26</sup> 그것은 서독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제도와는 그 구조나 직업교육의 목표, 방법 및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sup>27</sup> 그러나 통일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은 통일조약에 따라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에게 돌아갔고<sup>28</sup>, 모든 직업학교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었다.<sup>29</sup>

통일조약에 의해 명확한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의 직업교육연례보고서를 보면 신연방지역에서 직업교육이 아직 방향전환단계에 있

.....  
<sup>24</sup> 동독의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졸업장의 인정 실태. 연방의회 의원 비쳐와 민사당의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1999년 3월 17일). 연방의회 인쇄물 DrS 14/574.

<sup>25</sup> <http://www.berlin.de/sen/arbeit/besch-impulse/berufsanerkennung/facharbeiterabschluesse.html>

<sup>26</sup> 독일통일 20년-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문서번호 54).

<sup>27</sup>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보고[발췌](문서번호 32).

<sup>28</sup> 통일조약[발췌]-제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C: 직업교육(문서번호 21).

<sup>29</sup>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문서번호 36).





다고 하였다.<sup>30</sup> 그 이유는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변화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야별로 상응하는 직업자격 조건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1992년도에 신연방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전보다 약 20 퍼센트 증가한 12,000여 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업교육훈련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당시 신연방주들은 직업재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예를 보면 기업의 직업교육 확충 지원, 직업교육연합 지원, 초기업적 연수생 지원, 기업현장에서의 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을 위한 협동모델 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했었다.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주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받았다. 재소자를 위한 교도소에서의 직업훈련 과정, 농업 분야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청소년 지원 단체를 위한 지원, 청소년 직업훈련을 담당할 교수인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마리안네 비어틀러는 이런 다양한 직업재교육/계속교육의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결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31</sup> 다양한 계속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적 절차 확립의 징표이며, 그것은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1996년에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행한 계속교육 연례보고서를 보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는 교육연수제가 도입된 것을

<sup>30</sup>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문서번호 36).

<sup>31</sup>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안네 비어틀러(문서번호 28).

알 수 있다.<sup>32</sup> 이 제도는 피고용자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그것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주정부는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한규정도 도입했다. 1996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사이에 1,663개의 프로그램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의해 교육연수 참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았다. 그중 27%인 445회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었고, 25%인 414개 프로그램은 문화, 그리고 48%인 794개 프로그램은 정치와 관련된 성인교육이었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주정부 예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재원은 1,330만 마르크에 달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비용의 지원 및 연방주 공인기관 및 민간교육시설 그리고 중점 과제 모델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아주 낮은 편이었다. 1994년 8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실업자로 등록되었던 171,440명 중 84,258명이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는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하였고, 1995년 8월에는 164,166명 중 34,341명만이 참가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그 결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경제현실 밀착형 자격능력’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었다. 1992년 이후 약 34,800명의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자격능력을 획득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주정부는 참가자당 1,300 마르크 상당의 지원금을 지출하였다.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신속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놀라

.....  
<sup>32</sup> 브란덴부르크주 1996년 계속교육 보고서(문서번호 48).



운 일이 아니었다.<sup>33</sup> 더욱이 구동독지역 주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전반에 자신이 보유한 자격과 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에 따라 급여와 임금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은 당시 신연방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것과 관계 없이, 통일 초기에는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능력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sup>33</sup> 동서독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문서번호 51).

## 나가며

1990년대 초반의 신연방지역 주민이 겪은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한스 요아힘 마츠가 1992년에 지적하였다.<sup>34</sup> 그에 따르면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부문의 변혁으로 인해 신연방주 청소년들의 방향감각 상실 증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그는 보았다. 교육을 통해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겪은 변화를 소화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교육은 서독에서 이미 확인된 것들을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히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서독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한 바 없는 후견인 행세로 받아들일 것이고, 결국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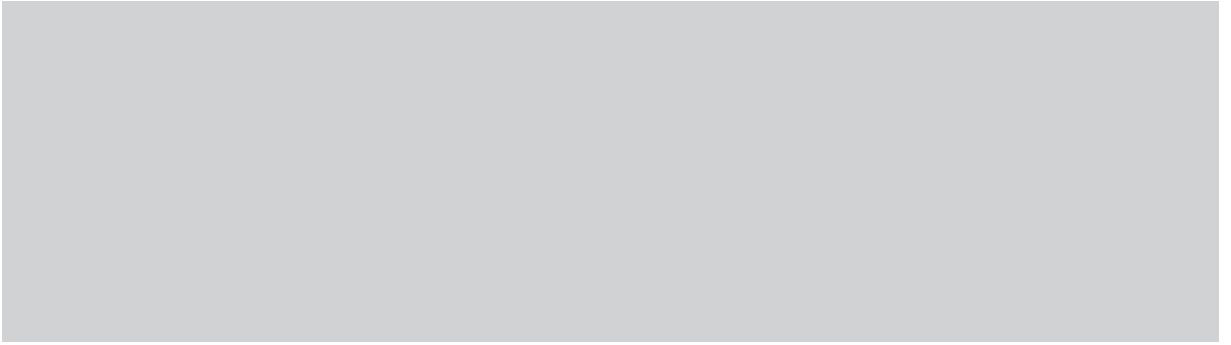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2016년 현재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는 더 이상 없다. 젊은 세대는 독일 사회를 동서 양쪽으로 분리하는 것조차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자리잡게 된 것인지 그리고 신연방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과 계속교육이 결과적으로 마츠 박사가 지적하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에 신연방주에서 제공된

.....  
<sup>34</sup> 신연방주의 계속교육[발췌](문서번호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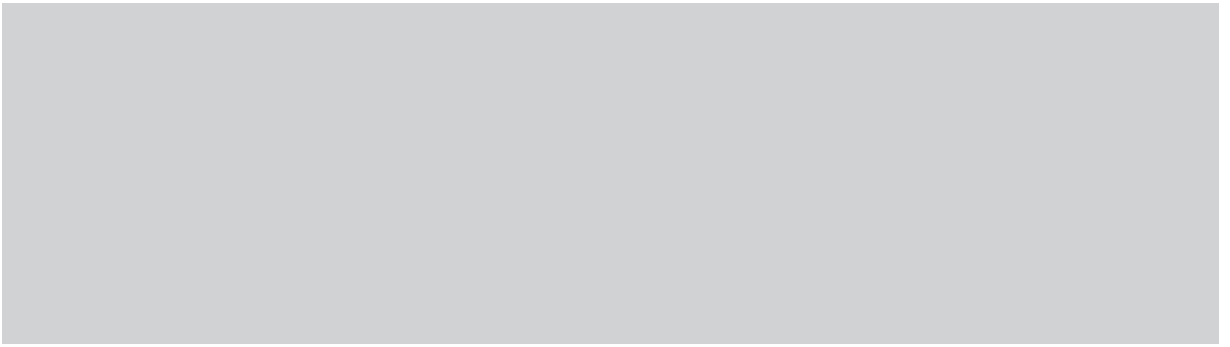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직접적이고 참여한 대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동독 '국가시민' 교과서의 재정비에 관해-츠빅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서 방법론' 학부의 입장	1989년 11월 10일	츠빅카우 교육대학(PH) 내 '국가시민 교과서 방법론' 학부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2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서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회의 권고	1989년 11월 16일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회의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3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서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	1989년 11월 29일	동독 교육 · 학술부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4	직업적 안정을 위한 시민재교육령	1990년 2월 8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Ausgabebetag: 2. März 1990
5	동독내각회의 의결안-노동력의 [분야별] 조정 및 노동력 재교육 조치의 현황에 대해	1990년 2월 13일	동독내각회의; 노동일선 실무단 책임자, 하인트 슈미트	Sammlung(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HdBA Mannheim): SEAD-BA 8.4 / 618
6	동독 내 '사회' 교과서의 새 도입에 관해-동독 교육 · 학술부 지시	1990년 2월 21일	동독 교육 · 학술부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	1990년 3월	동독 교육 · 학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동독 교육 · 학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9	중앙위원회 내 교육 · 육아 · 청소년 부문 실무단	1990년 3월 5일	중앙위원회, 교육 · 육아 · 청소년 부문 실무단, 한스 모드로우 수상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1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0년[발체]	1990년 4월	연방교육 · 학술부장관 위르겐 W. 밀레만; 동독 교육학술부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0,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6, Berufsbildungsbericht 1990. Bad Honnef: K.H. Bock Verlag
11	사업체에 소속된 유치원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직업학교의 유지에 관한 명령	1990년 6월 6일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Ausgabebetag: 19. Juni 1990
12	서독의 수공업 분야 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플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Ausgabebetag: 27. Juli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	직업학교법(동독)	1990년 7월 19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ag: 13. August 1990
14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ag: 13. August 1990
15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57-Ausgabetaag: 4. September 1990
16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 기간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지시-동독 교육 · 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Ausgabetaag: 4. September 1990
17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	1990년 9월	동독 교육 · 학술부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18	일반교육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ag: 26. September 1990
19	통일조약[발취]-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20	통일조약[발취]-제16장: 연방 교육 · 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B: 청소년 직업교육지원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21	통일조약[발취]-제16장: 연방 교육 · 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C: 직업교육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	계속교육에 대한 본(Bonn) 성명서: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 신교 성인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의 요구	1990년 9월 21일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4 f.
23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 등교육 1단계 '사회 교과'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 · 교육 · 스포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2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 회 교과: 하움트술레, 레알술레 및 김 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 · 학 술 · 문화부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제목	일자	담당자/기관	출처
2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교과: 중등 학교 중 하문트솔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작센-안할트주 교육 · 학술 · 문화부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26	튀링겐주 내 사회 교과: 레알솔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튀링겐주 문화부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27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1년[발췌]	1991년 4월	연방 교육 · 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8, Berufsbildungsbericht 1991,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팀장관 마리에네 비어틀러	1991년 4월 15일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팀장관 마리에네 비어틀러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7-329
29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국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30	통일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발제]	1991년 12월 10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1773
31	연방 경제부에 고용된 구동독 경제통상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자료	1991년 12월 16일	연방의회; 경제부 국회사관 리들; 연방의회 의원 비스민(기민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1872
32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회의의 보고[발제]	1992년 3월 16일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BLAK)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12-315
3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2년[발제]	1992년 5월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1. Beruilsbildungsbericht 1992.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4	신연방주의 계속교육[발췌]	1992년 6월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29, Juni 1992
35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2월 4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민사당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Drucksache 12/4262
36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	1993년 4월	연방 교육 · 학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3,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4, Berufsbildungsbericht 1993, Bad Honnef: K.H. Bock Verlag
37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의 규율 및 진흥을 위한 법	1993년 12월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26, S. 49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9-331
38	동서독지역 조정사무소 주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1994년 2월 17일 및 18일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39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1994년 3월 12일/1995년 9월 28일	매르키체 오데르차이퉁(Märkische Orderzeitung)/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Zeitungsauschnitt der Märkischen Oderzeitung vom 12.03.1994/Zeitungsauschnitt der Mitteldeutschen Zeitung vom 28.09.1995.
4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4년[발췌]	1994년 4월	연방 교육 · 학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4,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40, Berufsbildungsbericht 1994, Bad Honnef: K.H. Bock Verlag
41	각 연방주 내 계속교육정책[신연방주 관련 내용 발췌]	1994년 6월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33, Juni 199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2	체계적인 향상 교육-성공적 접근	1995년	독일노동실무협회, 동서지역 조정기관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4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5년[발체]	1995년 6월	연방 교육·학술·연구·기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Hrsg.). Berufsbildungsbericht 1995. Bad Honnef: K.H. Bock Verlag
44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직업교육부분 발체]-연방의회 민주시사회당(PDS)의 대정부 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답변	1995년 11월 28일	연방의회; 민주시회당(PDS) 연방의회 [교섭단체미팅] 소수그룹;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5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대학 부분 발체]	1995년 11월 28일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6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대학 외 연구 분야 발체]	1995년 11월 28일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7	독일의 고용 및 자격심사 기관	1996년 1월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노동 연방연구회	BAG Arbeit e.V.
48	브란덴부르크주 1996년 계속교육 보고서	1996년 12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644
49	통일 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년 소년	1997년	케어스틴 자이링;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50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사례 및 관련 점들	1997년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버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슈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1	동서독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	1997년	마르크 쉬틀릭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52	신연방주 내 계속교육을 위한 상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 및 성과	1999년	디트리히 하르케; 하인리히 크뤼거; 연방 직업교육원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eft 45
53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20년-연표	2009년 1월	트루다 앤 스미스(Truda Ann Smith)의 논문	BAG Arbeit e.V.
54	독일통일 20년-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	2009년 10월	독일연방정부	Magazin für Soziales, Familie und Bildung
55	노동 연방연구회 엘렌 루트 슈나이더 (Ellen-Ruth Schneider)와의 인터뷰	2010년 9월 30일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	
56	신연방주 관련 노동사회부(BMAS) 조치	2010년 10월	연방 노동 · 사회부(BMAS)	
57	신연방주 관련 연방 교육연구부 (BMBF) 조치	2010년 10월	연방 교육 · 연구부(BMBF)	
58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및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라인홀트 라이츠 후스터	
59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	
60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첫 10년	2011년	베르너 퀴첵	<a hre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a> (Stand: 15.6.2015)

#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60)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츠빅кау 교육대학(PH)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1월 10일에 츠빅кау 교육대학의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학과의 교수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동독의 ‘교육학 저널’(1989년 말 발행), ‘역사 및 국가시민 교과 저널’(1990년 1월호)에 수록되었다. 그들은 학교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가시민 교과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된 새로운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 교육과 육성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시민 교과의 명칭을 사회 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능력 배양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1989년 11월 당시 동독에서 진행되던 국가시민교육의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 거기에는 수업량이 과도하게 많으며 수업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수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과정으로 전락되어버린 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보면 그들이 동독에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2**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

1989년 11월 16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 교육부가 국가시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독일 교사신문에 발표한 것이다. 이 권고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민교육 과목은 일단 통상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학기말이 아니라 학년말에 성적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구두로 진행되던 교과 최종 이수시험을 생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7학년에서 10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시민교육의 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은 사회주의 색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대상인 학생들을 앞으로 '사회주의의 개혁'을 담당할 할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경제체제, 사회 및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권고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도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 병존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동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3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  
1989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동독 교육부는 이 견해서에서 성숙한 국가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시민 교과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국가시민 교과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현 학년도에 있어 현행 교과시간은 계속 유효하며, 동년 하반기의 상세 계획은 1990년 말까지 공표될 것이다. 1990-1991년도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토론을 위한 더 많은 사항을 밝힐 것이다.

출처\_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문서  
번호 4

직업적 안정을 위한 시민재교육령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 초에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임금부 및 그 하부 기관은 매년 필요한 직업전환교육 조치의 범위 및 체계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부와 산하 기관들은 노동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직업전환을 위한 학습과 교육 내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공해야 한다. 직업전환교육 기간 중 시민들은 정해진 실업지원금을 받는다. 사업체들과 교육기관들은 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Ausgabetag: 2. März 1990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노동알선 실무단 책임자, 하인트 슈미트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초에 동독 노동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미 동독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31일까지 145,030명의 노동력이 해고되었다. 이 수치는 환경과 수익성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였거나 구조조정과 필요한 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 중 107,575명은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 37,455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총 158,602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베를린이다. 베를린에 현재 고용가능한 일자리는 14,782개인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9,592명이다. 방출된 노동력의 대부분은 '전문직 및 대학졸업자'로 불리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 베를린에 이 그룹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단지 1,968개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학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아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지원자 대 일자리 수의 비율이 줄(Suhl)지역의 경우 1:1.3인데 반해, 베를린에서는 1:8이다.

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일자리가 과대 공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노동력의 분포가 지역의 사업체 분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단은 방출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직업전환교육을 수료한 후 얻을 수 있는 직업과 직장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다.

노동력 및 자격능력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면모를 쇠신하게 될 노동청과 협력 하에 노동시장연구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_ Sammlung(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HdBA Mannheim): SEAD-BA 8.4 / 618



문서  
번호 6

동독 내 '사회' 교과와 새 도입에 관해-동독 교육·학술부 지시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 2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내린 지시로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사회 과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이 도입될 사회 과목을 담당할 교원은 사회 과목을 전공했거나 그와 관련된 연수 등을 통해 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각 교육위원회는 지역의 교육지도본부(Kabinett) 및 여러 학술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동서독 교원 간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산하 교사교원 계속교육 중앙연구소(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가 사회 교과 담당 교원들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1989/1990학년도 후반기 사회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별도의 성적평가 없이 수업참가이수증만을 발급받도록 한다고 지시하였다.

출처\_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학술부가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의 철학수업과 관련하여 내린 권고안이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통해 철학수업이 상이한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파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가르침에 편향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하며, 바로 이점에서 철학과목이 이전의 국가시민교육 과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철학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자율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데 목표가 있으며, 그를 위해 철학수업의 교과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수방법의 경우 이전과 달리 교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고 특히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문서 번호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과정계획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운 교과인 사회 과목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7학년과 8학년 대상의 교과 내용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환경에 맞추어져 있다면, 9학년과 10학년의 경우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초점이 있다.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중의 대화에 있어 학습한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문서  
번호 9

중앙원탁회의 내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_ 중앙원탁회의,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한스 모드로우 수상

내용\_

이 문서는 중앙원탁회의에 설치된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이 원탁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사안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와 의회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정당 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 국가 예산에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예산을 반영
-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재원과 시설 그리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마련

출처\_ Thaysen, Uwe(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문서  
번호 1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0년[발췌]  
 1990년 4월

**담당자 / 기관** 연방교육·학술부장관 위르겐 W. 뮐레만;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1990년에 발간한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에서 동서독 간의 교류에 관해 설명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동독과의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직업교육 부문에 있어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9년 11월 동독에서 급격한 변혁이 시작된 이후 동서독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이 변화되었고, 협력이 확대되었다. 1990년 1월에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동독 교육부는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공동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앞으로 구성될 기구의 과제와 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협력의 목표는 동독의 개혁과정이 계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동서독은 이미 1987년 이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현재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왔다. 이 회의를 위해 동독의 대표들이 서독 연방교육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미 직업교육과 관련한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었다.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0.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6. Berufsbildungsbericht 1990. Bad Honnef: K.H. Bock Verlag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로타 드 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의 개혁정부가 발표한 직장 내 교육기관과 탁아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조치이다. 드 메지에르 정부는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입각한 이후 개혁을 위해 수많은 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이 명령도 직업교육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들은 탁아시설 및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종합기술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교육과 관련해 합의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업체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그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유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체가 자신의 의무와 유치원, 직업교육기관 등의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체에서 부담한다. 사업체들은 교육시설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적자금 지원이나 세금감면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직업교육 중인 견습생은 직업교육을 주관하는 사업장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도 직업교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해체될 경우 기업은 견습생이 다른 사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이 명령에는 사업체가 보유한 부동산과 다른 시설 설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Ausgabetag: 19. Juni 1990



문서  
번호 12

서독의 수공업 분야 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조약이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서독의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지역에 주 단위의 담당 관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동독의 구역행정기관이 동독지역에서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독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서독 연방정부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동독에 다른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 외에, 기존의 수공업 사업체 운영 자격 및 마이스터 자격증 사용,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 교육 및 그와 유사한 다른 권리는 보호받으며, 기존의 견습관계는 견습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Ausgabetag: 27. Juli 1990

문서  
번호 13

직업학교법(동독)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_

이 법은 화폐통합 이후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으로 각 연방주가 학교법을 제정할 때까지 직업학교의 업무와 설치 그리고 재정을 규정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는 공립학교이다. 직업학교의 운영주체는 시외 행정구역들 및 각 시이다. 직업교육 수업은 독일연방의 독일주문화교육장관협의회가 정한 통상의 교과과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문직종의 직업교육의 경우 직업교육서류 및 시험규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별도의 학교졸업시험은 실시되지 않는다. 1990년 9월 1일부로 운영주체는 직업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체 직업학교 및 지역 직업학교는 1990년 8월 31일부로 해소된다. 그 물자 설비는 새로 설립된 직업학교로 이전된다. 국가는 사업체 운영 및 직업학교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그를 감독한다. 직업학교의 수업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g: 13. August 1990





**문서 번호 14**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

이 문서는 화폐통합 이후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직업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독의 법률규정들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의 견습관계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견습생이 원할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명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체는 기존에 체결된 견습계약들이 만료될 때까지는 직업교육생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직업아카데미와 사업체 부설 다른 직업재교육기관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Ausgabetag: 13. August 1990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전인 1990년에 여름방학 이후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동독 교육부장관이 8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중에 직업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서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등단계의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1990학년도에 학교를 떠났으나 아직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있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은 1990-1991학년도에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다음 단계의 학급과정을 수료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받았던 수업단계를 끝까지 수료할 수 있다. 10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일 경우 이들은 상응하는 수행능력을 전제로 11학년으로 확대 일반고등학교(EOS)에 전입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재입학을 위한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57-Ausgabetag: 4.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16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 기간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지사-동독 교육·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장관이 통일 직전에 내린 조치로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에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거나 무직업 상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소요될 재원은 직업학교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1990년 9월에 새로 시작되는 견습 및 직업교육 학년도부터 실시되며, 통일 이후 구축될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방주들이 자체적인 학교법을 제정하는 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Ausgabetag: 4. September 1990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에 설치된 정치교육프로젝트 그룹이 통일 직전에 작성, 제출한 권고안이다. 이 프로젝트 그룹에는 동독과 서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시간의 수업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교육학자 담당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서 각 연방주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동독지역의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앞으로는 사회과 교사의 교육은 사회과학, 전문적인 교수방법론 및 교육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학위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교직과정이 현재 동독의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독지역 대학들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한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18 일반교육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동독정부가 통일 직전에 발표한 학교령이다. 그 목적은 동독지역의 학교제도를 서독의 학교체계와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지닌 과제와 목표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공립학교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Kommune)가 된다. 학교제도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학교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Schulversuch)을 도모하거나, 혹은 특별한 실험학교(Versuchsschule)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지원센터(Jugendhilfe) 및 특수학교, 자문단체 및 보건의료소 등의 기관들과 학교 간의 협력방식도 새로이 규정된다.

출처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부록 I 14장 중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법들이 변경된다.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대학 계획위원회의 경우 대학건설진흥법에 따라 대학교의 설립 및 확충의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 대신, 단순 다수결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도 말까지 대학건설진흥법의 부록에 언급된 대학교의 목록에 동독지역의 대학교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1994년도 말까지는 동독지역의 대학교들을 위한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기본법에는 동독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입학심사과정도 전국입학조정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동독 병역의무자의 병역수행 및 병역 중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대학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독지역에 설립된 연방주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학기본법 규정에 상응하는 연방주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연방직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직업학교, 야간 하우트슐레, 직업 단기과정, 김나지움 및 야간 실업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월간 직업교육 지원금의 액수를 동·서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책정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문서 번호 20 통일조약[발췌]-제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B: 청소년직업교육지원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직업교육진흥과 관련된 조항이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서독법들도 통일조약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진흥연방법
- 직업교육진흥 자문단 설립에 대한 명령
- 상위 전문대학, 학원 및 대학 수학 시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명령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추가지원 명령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21

통일조약(발췌)-제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 분야, 분야C: 직업교육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장이다. 이 조약에 따라 변경되게 될 서독의 연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법:

직업교육필요직업군 및 전문직직업군 체계에 따른 자격시험합격증은 동서독 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동법 2절);

특정 명령들은 연방주 총리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동법 3절 a항);

기존의 직업교육 관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d항);

사업체들은 견습계약에서 그것이 요구되는 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그 목적에 맞게 지속할 의무를 지닌다(g항);

전문직직업군 체계에 부합하게 직업교육을 받은 견습생들은 종전의 법률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i항).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22** 계속교육에 대한 본(Bonn) 성명서: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의 요구

1990년 9월 21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KBE)

**내용**

이 문서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을 담당해 오던 서독 단체들의 협의회 대표들이 통일 직전인 1990년 9월 21일에 서독의 수도인 본에 모여서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될 신연방주에서도 계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업무는 법률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과 규칙을 확립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기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노동진흥법의 적용을 보장하여 계속교육 기관들이 고용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출처**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4 f.

문서  
번호 23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교과'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_

이 문서는 중등교육 2단계 대상 '사회 교과' 영역 교육과정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이 도입될 교과과목의 과제와 목표가 요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국가시민 교과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어진 '진리'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 대신에 정치적 내용을 비판적이지 성찰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정치시민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들이 복합적인 사회적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받아야 하며 정치적 극단주의에 몰두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본 교과계획에서는 사회 교과에 있어 교수학적 구상 및 다루어질 만한 주제 분야들이 제시되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문서  
번호 2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교과: 하업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개편을 위해 마련한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과목은 사회적이지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단지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추상화 및 난이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출처\_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번호 2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교과. 중등학교 중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계획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하웁트슐레에서의 사회 과목 수업은 학생들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연관지으며 이루어진다. 일상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행위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문서  
번호 26

튀링겐주 내 사회 교과: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튀링겐주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튀링겐주의 문화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교육과정에 관해 발표한 임시계획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과목의 과제는 급속한 사회 변동을 깨닫게 하며 점차 더 복잡해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의 정치적 차원을 인식하게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이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을 정해 이를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김나지움에서 학생들에 대해 구동독에 대해 또 통일 과정의 결과 체험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이 전달되어야 한다. 수업은 통상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며 교수학적으로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들에 근거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의견 그리고 경험을 관련지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문서  
번호 27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1년[발췌]  
1991년 4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내용\_

이 문서는 1991년도 연방정부가 발표한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990년도 직업교육자리 현황: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자리의 현황은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수치로, 직업교육자리의 공급이 수요를 약 18 퍼센트 초과하였다.
- 직업교육정책의 조건 및 중점 사항
-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
- 1990년도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의 직업교육자리 현황
- 1990년도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의 사업체 내 직업교육자리 현황
- 신연방주들 및 구연방주들에서 학교중퇴자의 직업교육현황
-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의 사업체 외부 직업교육기관의 변화
-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청소년의 직업교육장려
- 노동진흥법(AFG)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 계속교육(추가교육, 전환교육 및 사업체 적응교육)
- 신연방주들 및 동베를린에서 직업교육장려
- 구연방주들에서의 직업교육보조금

출처\_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8. Berufsbildungsbericht 1991.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번호 28**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1991년 4월 15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초대 교육부장이었던 마리엔네 비어틀러가 계속교육의 개혁과 의미에 관해 연설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결손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속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적 절차 확립의 징표이다. 계속교육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계속교육 운영주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프로젝트 지원은 계속교육법에 따라 규율한다. 프로젝트 지원에 있어 양성평등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1.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7-329

문서  
번호 29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국

내용\_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사무국이 통일조약 37조에 의거해서 동독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교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의 기존 교사들의 교사자격 인정은 각 주의 청소년담당국과 해당관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청은 교사들이 동독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교육의 입학자격, 내용, 기관 그리고 졸업시험 등이 유효규정에 부합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사직 직업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3년 이상의 교사직을 수행한 직업경력은 6개월 간의 보충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상관없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직의 호칭은 독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출처\_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문서  
번호 30

통일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발췌]  
199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목표가 정의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현안과 미래에 대한 질문, 특히 통일된 독일에서의 정치적이자 사회적 통합이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고도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받아들여지도록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연습되어야 하며, 갈등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과 합의에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배양되어야 한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1773

문서  
번호 31

연방 경제부에 고용된 구동독 경제통상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자료  
199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경제부 국회차관 리들; 연방의회의원 비스만(기민당)

내용\_

연방 경제부차관 리들은 통일 이후 연방 경제부 베를린 지청에 고용된 395명에 달하는 구 동독 경제통상부 및 환경에너지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연방 경제부가 어떠한 재교육 및 자격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중 181명은 본 혹은 베를린에 무기한으로 고용된 상태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1993년도 7월에 종료되는 시한부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교육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그 교육 중 일부는 베를린 지청에서 직접 실시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1872



문서  
번호 32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보고[발췌]

1992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BLK)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연구지원위원회(BLK)가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의 변화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체제에서는 직업교육이 교육부문 중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직업교육에도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와 국가의 경제구조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직업교육은 서독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제도와는 그 구조나 직업교육의 목표, 방법 및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1990년도 직업교육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동일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고 교육 내용도 통일되었고, 국가적으로 승인된 직업교육을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출처\_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12-315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프레프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2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연방정부의 교육부장관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회가 공급되어야만 하며, 신연방주의 경제구조 변화는 직업훈련을 위한 계속교육의 실행과정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 현황(사업체 내 직업교육 및 청소년의 교육형태)
- 직업교육의 내용적 구성과 구조문제
-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을 구연방주지역의 직업교육 실태에 맞게 조정하는 일
- 직업 계속교육
- 판매업 부문에서의 자격취득수요
- 신연방주 내 사회서비스에서 전문 및 지도인력의 계속교육
- 신연방주에서의 사업체 외부 직업교육기관의 지원

출처\_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1. Berufsbildungsbericht 1992. Bad Honnef: K.H. Bock Verlag

담당자 / 기관\_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의 할레 정신과병원의 의사 한스 요아힘 마츠박사와 사회학자 모니카 슈미트가 신연방주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다. 마츠박사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부문의 변혁은 신연방주 청소년들의 방향감각 상실 증세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 부문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겪은 변화를 소화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어야 한다. 서독에서 이미 확인된 것들을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독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고하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한 바 없는 후견인 행세로 받아들일 것이고, 결국에는 동·서독지역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모니카 슈미트는 작센-안할트주의 어느 작은 지역 내 노동청 소속 직업전환조치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마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채 그곳 주민들과 대처해야 하는 식민지 경영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구동독지역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잘 협력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프로그램 그룹의 일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사회교육학적 상담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직업적 요구조건이나 업무에 대해 수업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전달되어, 이후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출처\_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29, Juni 1992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민사당

내용\_

이 문서는 민사당이 제출한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의 질의는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해를 보았으며 구조변화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조치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체제적으로 차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자의 60%가 여성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90%에 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설명하였다. 360억 마르크가 구동독지역의 노동정책에 투자되었고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그리고 직업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창업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에 도제로 직업훈련을 시작한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은 37.4%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답변을 통해 나아가 조기정년퇴직한 여성의 연금문제, 대학졸업 여성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Drucksache 12/4262



문서 번호 36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3년[발췌]  
1993년 4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3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신연방주지역에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연방지역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또한 아직 방향전환단계에 있다.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변화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상응하는 직업자격 조건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는 1992년도의 경우 사업체 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가 종전보다 약 20 퍼센트 많아져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12,000여 개로 증가될 수 있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방정부의 직업교육 장려는 중소 사업체들이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직업교육훈련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생 및 다른 직업교육부문의 전문인력들의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3.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4. Berufsbildungsbericht 1993. Bad Honnef: K.H. Bock Verlag

문서  
번호 37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의 규율 및 진흥을 위한 법  
1993년 1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계속교육진흥법의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변경되었다.

- 계속교육 개념과 그 의미: 계속교육은 교육부문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1절).
- 계속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학습의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1절).
- 계속교육의 운영주체 및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만들 권리를 지닌다(2절).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26, S. 49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9-331



문서  
번호 38

동서독지역 조정사무소 주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1994년 2월 17일 및 18일

담당자 / 기관\_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

**내용\_**

이 문서는 계속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조직한 독일노동실무협회의 업무에 관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는 회원 단체 간의 경험교류 및 계속교육 세미나와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전문가와 실무를 연결해 주는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있다.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서로 체계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직업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전수와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별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는 영역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력향상 및 기타 자격취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_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문서  
번호 39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1994년 3월 12일/1995년 9월 28일자

**담당자 / 기관**\_ 매르키셰 오데르차이퉁(Märkische Oderzeitung)/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중반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구동독의 주민을 위해 지역신문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기 신문 독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전략에 자문해 주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자문에 동원된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다.

**출처**\_ Zeitungsausschnitt der Märkischen Oderzeitung vom 12.03.1994/Zeitungsausschnitt der Mitteldeutschen Zeitung vom 28.09.1995.

문서  
번호 4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1994년[발췌]  
1994년 4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4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에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었다. 사업체 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정부의 공동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수공업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독지역에서는 대단위 산업지역의 사업체 내 직업교육 공급이 축소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은 일반 교육부문이나 대학교 교육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에 더욱 발전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Hrsg.). 1994.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40. Berufsbildungsbericht 1994. Bad Honnef: K.H. Bock Verlag

담당자 / 기관\_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계속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의 모음집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내 계속교육의 법적 토대는 연방주 헌법과 계속교육법(BbgWBG)이다.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은 33조에서 계속교육진흥 의무 외에도, 자유운영주체의 계속교육기관을 설치할 권리 및 직업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계속교육 기간 중 근무면제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계속교육법은 이와는 달리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의 실시와 같은 계속교육의 진흥을 목표로 한다. 그를 통해 시장정책적 위기상황의 타개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계속교육 조치에 대한 기본적 지원은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약 40,000명의 주민당 2,400시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1996년도에 이 비율은 30,000명당 2,400시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적 지원을 위한 (총 비용이 전체 490만 마르크에 달하는) 인적·물적 비용의 50 퍼센트는 연방주가 부담한다.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연간 620만 마르크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1996년도부터는 총 지원금액이 약 830만 마르크로 증가해야 한다.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금액은 소액에 해당한다.

다른 연방주들의 상황을 보면 주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작센주의 경우 계속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 작센주는 계속교육기회의 제공을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직업계속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논문들은 모두 직업계속교육의 현재 수요와 관련하여, 또는 그 외 정치적 혹은 문화적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급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_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33, Juni 1994

담당자 / 기관\_ 독일노동실무협회, 동서지역 조정기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노동복지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의 위임을 받은 독일노동실무협회에 의해 1992년에 세워진 동서지역 조정소의 업무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 기관은 유럽사회기금(Europäische Sozialfonds)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지역 조정기관은 노동정책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구동독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의 고용지원원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노동실무협회는 임금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자리, 자격취득, 중개보조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원 및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사회적 기업에 있어 담당기관을 아우르는 연방차원의 연합단체이다. 동서지역 조정소 설립의 출발점은 구동독지역의 조건과 필요에 부합하며 임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동서지역 조정소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통합모델로 발전하였다. 조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경험교류를 포함한 심포지엄, 계속교육 세미나, 실습 및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 중개,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프로젝트에 자문해 주는 것이다. 이 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담당 주 행정부처, 지역행정처, 경제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역 교육 담당기관 및 조직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기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실업퇴치를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이런 활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업무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독일노동실무협회가 추구하는 고용지원기관의 유럽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도 동서지역 조정소의 초지역적 교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동서지역 조정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유럽의 다른 나라에 전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연구·기술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5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3-1994년도 직업교육훈련 지원률이 17.5 퍼센트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 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명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청소년들에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다. (문서 내 개관 1. 참조) 지원자의 총 수는 171,100명이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이와는 달리 (총 455,200명 중 235,200명에 해당하는) 전체 지원자의 약 52 퍼센트의 지원자만이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1994년에 신연방주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다음 해에도 충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 사업체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직업교육훈련은 직장 내 직업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은 고용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Hrsg.). Berufsbildungsbericht 1995. Bad Honnef: K.H. Bock Verlag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  
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직업교육부분 발취]-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의  
대정부 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답변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 연방의회 [교섭단체미달] 소수그룹;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이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과거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수료증 및  
능력증명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연방노동청(BA)은 연방직업교육연  
구원과 공동으로 동독 내 직업교육필요직업군과 서독의 직업군을 서로 비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동독체제 하에서 인민소유산업체(VEI)에 소속되었던 마이스터('VE'-Meister)들은 자영업  
적 수공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신연방주들 내 중산층 경제를 신속하게 재건하  
기 위해 인민소유산업체(VEI) 소속 마이스터('VE'-Meister)들은 다른 마이스터와 동등하  
게 자영업적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았다.

1994년도 2월부터는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적응능력평가가 직장 내에서 시행되었다. 이 평  
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신연방에서는 동독체제에서 상업 및 기업  
경영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 직업군에 대한 적응능력평가가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자격  
능력-능력개발-관리' 프로젝트(QUEM)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 중인 신연방주  
들 내에서 자격능력을 시장경제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응시키는 데 지원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말에 총 1,040,853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였다. 그중 213,127명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827,726명은 직업교육수료자였다. 후자 중 38,477명은  
대학 졸업자였고 7,891명은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65,780명은 전문학교 졸업자였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54개 대학교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접근성의 정도, 연구시설과 설비 그리고 국제적 학술교류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동독대학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학사조직과 (장학금, 주거공간의 제공, 자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탁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1996년 말까지 24억 300만 마르크를 구동독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중 연방정부가 75 퍼센트를, 연방주들이 25 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연방주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방주의적 원칙 하에 새로운 대학교 체계가 이 지역에 구축되었다. 구동독지역에는 이제 15개 종합대학교, 21개 공공 전문대학교 및 12개 미술 및 음악대학교가 존재한다. 1989년도와 비교하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9,500명 감축되었다. 교수직의 수는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새로운 교수 임용 절차들이 1995년도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경제부는 구동독지역 산업부문에서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였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문서  
번호 46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  
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대학의 연구 분야 발췌]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대학 외 연구기관은 주로 3개의 학술원에 소속되었다. 이들 연구소의 시설과 설비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연구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었다. 연방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달했던' 중요한 연구들도 있었다.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들 연구소들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방주들의 산하 기관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300명이 넘는 국내 및 외국의 학자들이 1990년 가을까지 이루어진 심사에 참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13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연구인력을 포함한 연구소 인력과 고용관계는 우선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뒤따른 사회적 후속 영향들은 특히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을 통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었다'(이 프로그램은 1992년도에서 1996년도까지 지속되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교육부는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구동독지역 연구 부문에 총 108억 마르크를 지출했다. 1995년도의 경우 이는 32억 마르크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설립된 신규 연구소들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설과 설비 문제 등은 계속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담당자 / 기관\_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노동 연방연구회

### 내용\_

이 문서는 독일노동실무협회가 발간하고 엘렌 루트 슈나이더가 작성한 보고서로 통일 전 후 고용지원기관의 발전과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 붕괴로 인해 현재 독일에는 42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조화된 실업으로 빚어지는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년간 일련의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실업 그리고 특히 장기실업의 위험을 받으며 시달리는 개인 및 노동시장 정책의 기타 목표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을 사회 그리고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용, 직능개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지원기관-임무 및 활동

고용지원기관이라는 명칭은 자율적으로 운영주체 또는/그리고 법적으로 독립적인 공법 또는 사법 법인으로서

- 사회복지지원 및 노동시장 관련 활동을 통하여 실업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하며,
- 국가가 지원하는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때 또한
- 구조정책적 임무를 인지하며
- 그리고/또는 직능개발 및 직업증개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기업, 회사,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지원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포함된다:

- 지금까지 주로 서독지역에서 고용지원 및 직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해온 기업 및 이니셔티브
- 사회복지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창업지원을 연결하여 세워진 사회적 기업과 고용진흥 기업
- 신연방지역에서 활동 중인 고용지원회사와 고용 및 구조개발회사

### 기본 여건:

1995년 실업인구는 400만 명에 달하였다.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에서는 장기실업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고착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구서독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직능부족을 보이는 중장년층, 그러나 또한 건강상 제한을 받고 중증 장애를 지닌 자 그리고 이와 동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장기실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구동독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특히 장애가 되고 있다. 실업 감소, 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독일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고용지원법(Arbeitsförderungsgesetz,



AFG), 연방사회복지법(Bundessozialhilfegesetz, BSHG)과 같은 급부법(Leistungsgesetz)에 따른 고용지원수단, 유럽연합의 지원프로그램, 연방 및 주의 지원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상황:

독일노동실무협회는 고용지원기관들의 전국적인 연합기구이다. 1994년 현재 이 협의회에 가입회원기관(1994년 현재 약 80개 회원조직에서 15,000여 명이 활동 중)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고용지원 및 직능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고용지원기관들은 현재 사회복지정책상의 통합기능, 구조정책상의 생산기능 및 고용을 보장하는 노동시장기능을 맡고 있다.

출처\_ BAG Arbeit e.V.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행한 1996년도 계속교육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교육연수제도가 브란덴부르크주에도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피고용자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연수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정해졌다. 신연방주 중에서 이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된 곳은 브란덴부르크주 뿐이다.

1996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사이에 1,663개의 프로그램이 연방주로부터 교육연수 참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았다. 그중 27%인 445회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었고, 25%인 414개 프로그램은 문화, 그리고 48%인 794개 프로그램은 정치와 관련된 성인교육이었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주정부 예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재원은 1,330만 마르크에 달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비용의 지원 및 연방주 공인기관 및 민간교육시설 그리고 중점 과제 모델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1994년도 8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171,440명의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84,258명이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는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하였다. 반면 1995년 8월에는 164,166명 중 34,341명이 참가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때문에 주정부는 '경제현실 밀착형 자격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직능장려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위한 경쟁력의 개선, 일자리의 안정화 및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1992년 이후 약 34,800명의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자격능력을 획득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당 1,300 마르크 상당의 평균 지원액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실업자가 창업을 할 때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은 1996년도 총 720만 마르크 상당의 총 자체 예산 중 530만 마르크를 계속교육에 투입하였다.

출처\_ Parlementsdoc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644



문서 번호 49 통일 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소년 1997년

담당자 / 기관\_ 케어스틴 자이랑; 연방정치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간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으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청소년이 통일된 독일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초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얼마만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근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직업교육과 실제 직장생활 간의 연결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정리되었다:

- 1990년도와 1993년도 사이에 직업희망 및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기회에 대한 주관적 추측에 있어 동·서 지역 간의 대비
- 구동독의 경우 1990년도에서 1994년도까지, 서독지역의 경우 1989년도에서 1993년도 까지 각각 동서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추이
- 1989-1990년도에서 1993-1994년도까지 청소년들 중 실업자 수와 실업기간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문서  
번호 50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사례 및 관점들  
1997년

담당자 / 기관\_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바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쉬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직업교육원이 청소년의 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수년 간의 패널분석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목표는 직업교육 문제 및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그 외 청소년의 정서와 규범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1992-1993년에는 구동독지역 내 2,007명의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으로 서독지역의 777명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사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직업선택에 대한 의견,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기대, 사업체 내 학교 및 직업학교수업의 평가, 직업적 견해와 전망, 양친의 집과 가족의 의미.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문서  
번호 51

동서독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  
1997년

담당자 / 기관\_ 마르크 쉬들릭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행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통일 이후 독일 동서지역주민들 간에 직업자격능력과 업무상 기대능력치, 직업교육 적합성의 일치 내지 불일치의 정도와 그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지역 주민 간에는 직업교육과 일자리에 확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부적합하다고 조사된 구동독주민들의 대다수는 일자리보다 능력이 초과되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직업적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과 부적합한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주는 결과를 보면 동서지역 간에 더욱 큰 차이가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직업능력에 부적합하게 고용된 경우가 더 많다. 구동독지역의 피고용자들은 서독지역의 피고용자보다 더 자주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과 함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급여도 감수하고 있다.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로 인해 구동독지역 주민 중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그것은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능력이 통일된 독일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구동독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은 비교적 그에 상응하는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와 달리 특별한 직업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의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출처\_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담당자 / 기관\_ 디트리히 하르케; 하인리히 크뤼거; 연방직업교육원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지역에서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제도의 발전과 성과에 관해 연방직업교육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도 계속교육을 위한 자문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신연방주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프로그램 외에, '계속교육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초자자체 계속교육상담소의 구축'이라 불리는 시험모델 프로젝트(1991-1994년도 시행)가 특히 현지에 계속교육상담소를 창립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사회기금(ESF)의 재원 및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 사업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안할트주와 튀링겐주에 한 곳의 상담소, 그리고 작센주에는 두 곳의 상담소를 세웠다. 구동독지역의 모든 상담소는 서독지역의 상담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직업교육연구원을 통해 자료수집 평가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에 농촌지역에서 대체적으로 회의적이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대부분의 계속교육상담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 간 크게 증가하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도의 경우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 중 평균 55 퍼센트가 실업자였다.

출처\_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eft 45





문서 번호 53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20년-연표  
2009년 1월

담당자 / 기관\_ 트루다 앤 스미스(Truda Ann Smith)의 논문

내용\_

이 문서는 2009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독일노동실무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이 협회는 1989년 1월 20일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협회의 목적은 1989년 1월에 작성된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협회의 목적은 임금보조금이 직접 지급되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협회의 창립 이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전과 주요 활동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출처\_ BAG Arbeit e.V.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전문 매거진에 발표된 독일의 직업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관해 정리한 논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연방의회(Bundestag)가 1969년에 최초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을 제정하였고, 1990년 7월 19일에 동독의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가 이 법을 동독에서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독과 서독에서는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를 졸업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았었다. 동독과 서독의 직업교육체계를 비교해 보면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이 근로인력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드러난다. 국가 또는 사업체가 정하는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생(Auszubildende) 자리가 배정되었다. 직업학교(Betriebsberufsschule)의 목적은 직업훈련생을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성숙하고 고도로 숙련된, 계급의식을 갖춘 전문노동자’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통일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에게 돌아갔고, 모든 직업학교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었다. 구서독지역 청소년에게는 구동독지역에서도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구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고 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는 약 7,000개의 직업훈련 자리가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출처\_ Magazin für Soziales, Familie und Bildung

담당자 / 기관\_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

**내용\_**

이 문서는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특히 독일통일에 있어 지식전이(Wissenstransfer)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없었다. 동독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았다. 변혁 이후 이러한 느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사회조합(Sozialverbänden)들이 운영주체를 맡고 연방 노동사회부와의 협력 하에서 '독일노동실무협회(BAG)'가 설립되었고 베를린에 동-서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 업무보고서 기록들도 취합되었다. 사회조합들도 구동독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통일 초기에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할 공간이나 숙소, 기계설비와 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구동독 사람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공동체의 재원(사회기금)이 주어졌고, 그 외에도 연방사회구조법 및 노동진흥법(AFG)에 근거한 재원, 예를 들어 임금비용보조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정이 지원되었다. 그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초기에는 구동독지역의 지자체들이 무엇이 지자체가 져야할 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경우 노동조합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출처\_**

문서  
번호 56

신연방주 관련 노동사회부(BMAS) 조치  
2010년 10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노동·사회부(BMAS)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후 연방 노동·사회부(BMAS)가 취한 신연방주 관련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연방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1999년 구동독지역 직업교육기회 프로그램(Ausbildungsplatzprogramm Ost 1999) 및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이루어진 크세노스-특별프로그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교육, 그리고 분배’(XENOS-Sonderprogramm ‘Beschäftigung, Bildung und Teilhabe vor Ort’) 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출처\_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연구부(BMBF)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BMBF)가 취한 신연방주 관련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

-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
- '지역혁신 (InnoRegion)' 프로그램
- 지역혁신 성장핵심양성('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 진흥 프로그램
- 특별프로그램: "학문이 시장을 만든다"
- 연구과 수업에 있어 여성을 위한 성평등
- 동독지역 직업교육기회확충 프로그램
- 혁신능력센터
- 혁신포럼
- 경제관련 전문대(FH3) 내 응용연구
- 혁신 프로파일(InnoProfile)
- 직업교육 및 전문인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국가협약(2004-2010년)
- 대학교협약 2020
- 직장 외부 공동직업교육학교(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지원
- 직업스타터(Jobstarter)
- '기업과 지역' 혁신 이니셔티브
- '신연방주 내 첨단연구 및 혁신'

출처\_

담당자 / 기관\_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시정부의 교육학술부 소속 장학관과의 인터뷰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동독 출신 교사들은 통일 이후 자격확인 절차(Bewährungsfeststellung)를 거쳐 신연방주들 내에서 계속 교직을 이어나갔다. 단지 매우 적은 수의 교사들만이 그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교사들의 봉급은 연방이 정했는데, 그에 있어 동서독지역 간의 차등 급여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봉급 집단은 동독지역 급여체계에 따라 처음에 단지 서독지역 급여체계의 60% 만을 받았다. 하지만 급여는 수년에 걸쳐 동서독 간에 균등하게 조정이 되도록 체계가 잡혔다. 다른 한편, 베를린에서는 직원들 간의 급여 균등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100% 달성되었다.

비록 교사들의 고용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1990년도에 주교육청이 설립되고 교사의 고용을 중앙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되었다. 이 관청은 교사들을 베를린 전역에 있는 학교에 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서베를린의 학교들 사이에 교사들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또한 교사들도 서로를 알 기회가 생겼다.

통일 후 베를린 전역에서 서베를린의 교과과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른 연방주들은 자신의 파트너 연방주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것을 받아들였다.

출처\_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의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마싱 교수는 독일 정치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은 교사의 추가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에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시민 교과가 존재했다. 통일이 교육부문 전체를 개혁할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보아 서독의 체제가 동독지역으로 그대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들 간의 파트너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속교육 기회는 지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었다. 그 이유가 모든 교사들을 추가교육시키기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추가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출처\_

담당자 / 기관\_ 베르너 퀸첼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주정치교육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로 설립된 직후에 브란덴부르크주 주총리실에 임시로 구성된 ‘정치교육’ 위원회가 존재했다. 주정치교육원은 인권운동가 한스-유르겐 미셀비츠의 주도 하에 1992년 7월 1일에 공식으로 발족하였다. 설립 단계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파트너였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정치교육원으로부터 물질·인적 지원을 받았다.

1991년도 하반기에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예산 중 주정치교육원의 행정비용을 위해 109만 마르크, 정당 재단과 사립 운영주체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금으로 450만 마르크가 각각 지출되었다. 1992년도까지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주민 1인당 정치교육을 위해 2.6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국민 1인당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방정치교육원이 0.92 마르크, 베를린 0.82 마르크, 작센주가 0.34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그것은 브란덴부르크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정치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도의 경우 브란덴부르크주는 1인당 2.12 마르크를 정치교육 지원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1991년도에는 책정된 총 551만 마르크 중 단지 323만 마르크만이 지출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인구밀도가 낮기에 주정치교육원 단독으로 전역을 포괄하는 교육기회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정치교육원은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민간 운영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나아가 학교, 종합대학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의회와 같은 정치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993년도에는 약 560만 마르크의 재원이 지원될 수 있었는데, 1999년도에는 약 410만 마르크 밖에 되지 않아 운영주체들의 역량 발휘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법적으로 지원대상인 정당 재단 및 기초지자체 정치재단의 수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 운영주체들이 이러한 감축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1995년도에서 1998년도까지 지원 재원의 약 40%가 감축되었다. 앞으로도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교육 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감축해야만 한다.

출처\_ [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Stand: 15.6.2015)



# 교육 II

동서독 통일과정 정책문서

문서집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동독 "국가시민" 교과재정비에 관해 - 츠빅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	1989년 11월 10일	츠빅카우 교육대학 (PH)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2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 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	1989년 11월 16일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 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3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 - (동독) 교육부의 견해	1989년 11월 29일	동독 교육·학술부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4	직업적 안정을 위한 시민재교육령	1990년 2월 8일	동독 최고인회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5	동독내각회의 의결안 - 노동력의 [분야별] 조정 및 노동력재교육 조치의 현황에 대해	1990년 2월 13일	동독내각회의; 노동알선 실무단 책임자, 하인트 슈미트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18
6	동독 내 "사회" 교과의 새 도입에 관해 - 동독 교육·학술부 지시	1990년 2월 21일	동독 교육·학술부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	1990년 3월	동독 교육·학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동독 교육·학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9	중앙원탁회의 내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1990년 3월 5일	중앙원탁회의,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한스 모드로우 수상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1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0년 [발췌]	1990년 4월	연방교육·학술부 장관 위르겐 W. 빌레만; 동독 교육·학술부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0.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6. Berufsbildungsbericht 1990. Bad Honnef: K.H. Bock Verlag
11	사업체에 소속된 유치원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직업학교의 유지에 관한 명령	1990년 6월 6일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	서독의 수공업분야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2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 - Ausgabetag: 27. Juli 1990
13	직업학교법 (동독)	1990년 7월 19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14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15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16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년간 교육과정설치에 대한 지시 - 동독 교육·학술부	1990년 8월 14일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17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	1990년 9월	동독 교육·학술부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18	일반교육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 - 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Gesetzblatt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19	통일조약 [발췌] - 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20	통일조약 [발췌] - 제 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분야, 분야B: 청소년직업교육지원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 - 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21	통일조약 [발췌] - 제 16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분야, 분야C: 직업교육	1990년 9월 20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 - 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22	계속교육에 대한 본(Bonn) 성명서: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 (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 (KBE)의 요구	1990년 9월 21일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 (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 (KBE)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4 f.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3	브란덴부르크 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1단계 "사회교과"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2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내 사회교과: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교육·학술·문화부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25	작센-안할트 주 내 사회교과. 중등학교 중 하우프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6	튀링엔 주 내 사회교과: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튀링엔주 문화부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27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1년 [발췌]	1991년 4월	연방 교육·학술부 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8. Berufsbildungsbericht 1991. Bad Honnef: K.H. Bock Verlag
28	브란덴부르크 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 -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1991년 4월 15일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1.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7-329
29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회의 사무국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30	통일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발췌]	1991년 12월 10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1773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1	연방 경제부에 고용된 구동독 경제통상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자료	1991년 12월 16일	연방의회; 경제부 국회차관 리들; 연방의회의원 비스만(기민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1872
32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 -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보고 [발췌]	1992년 3월 16일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 (BLK)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12-315
3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2년 [발췌]	1992년 5월	연방 교육·학술부 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1. Berufsbildungsbericht 1992. Bad Honnef: K.H. Bock Verlag
34	신연방주의 계속교육 [발췌]	1992년 6월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29, Juni 1992
35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2월 4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민사당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Drucksache 12/4262
36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3년 [발췌]	1993년 4월	연방 교육·학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3.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4. Berufsbildungsbericht 1993. Bad Honnef: K.H. Bock Verlag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7	브란덴부르크 주 계속교육의 규율 및 진흥을 위한 법	1993년 12월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26, S. 49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9-331
38	동서독 지역 조정사무소 주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1994년 2월 17일 및 18일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39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1994년 3월 12일/1995년 9월 28일자	매르키셰 오데르차이퉁(Märkische Oderzeitung)/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Zeitungsausschnitt der Märkischen Oderzeitung vom 12.03.1994/Zeitungsausschnitt der Mitteldeutschen Zeitung vom 28.09.1995.
4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4년 [발췌]	1994년 4월	연방 교육·학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4.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40. Berufsbildungsbericht 1994. Bad Honnef: K.H. Bock Verlag
41	각 연방주 내 계속교육정책 [신연방주 관련내용 발췌]	1994년 6월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33, Juni 1994
42	체계적인 향상 교육 - 성공적 접근	1995년	독일노동실무협회, 동서지역 조정기관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4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5년 [발췌]	1995년 6월	연방 교육·학술 연구·기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Hrsg.). Berufsbildungsbericht 1995. Bad Honnef: K.H. Bock Verlag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4	독일통일 이후 5년 - 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 [ 직업교육부분 발췌] - 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의 대정부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답변	1995년 11월 28일	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 연방의회 [교섭단체미달]소수그룹;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5	독일통일 이후 5년 - 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 [ 대학 부분 발췌]	1995년 11월 28일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6	독일통일 이후 5년 - 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 [ 대학의 연구분야 발췌]	1995년 11월 28일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47	독일의 고용 및 자격심사 기관	1996년 1월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노동 연방연구회	BAG Arbeit e.V.
48	브란덴부르크 주 1996년 계속교육 보고서	1996년 12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644
49	통일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소년	1997년	케어스틴 자이링; 연방정치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50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사례 및 관점들	1997년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바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쉬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51	동·서독 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	1997년	마르크 쉬들릭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52	신연방주 내 계속교육을 위한 상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 제도의 발전 및 성과	1999년	디트리히 하르케; 하인리히 크뤼거; 연방직업교육원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eft 45
53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20년 - 연표	2009년 1월	트루다 앤 스미스(Truda Ann Smith)의 논문	BAG Arbeit e.V.
54	독일통일 20년 - 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	2009년 10월	독일연방정부	Magazin für Soziales, Familie und Bildung

##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5	노동 연방연구회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와의 인터뷰	2010년 9월 30일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	
56	신연방주 관련 노동사회부(BMAS) 조치	2010년 10월	연방노동·사회부(BMAS)	
57	신연방주 관련 연방교육연구부(BMBF) 조치	2010년 10월	연방교육·연구부(BMBF)	
58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및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	
59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7일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	
60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첫 10년	2011년	베르너 쾨첼	<a hre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a> (Stand: 15.6.2015)



## 문서 번호 1

### 동독 "국가시민" 교과재정비에 관해 - 츠빅кау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 츠빅кау 교육대학 (PH)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1월 10일에 츠빅кау 교육대학의 국가시민 교과방법론 학과의 교수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동독의 "교육학 저널" (1989년 말 발행), "역사 및 국가시민교과 저널" (1990년 1월호)에 수록되었다. 그들은 학교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가시민 교과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된 새로운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 교육과 육성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시민교과의 명칭을 사회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능력 배양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1989년 11월 당시 동독에서 진행되던 국가시민교육의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 거기에는 수업량이 과도하게 많으며 수업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수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과정으로 전락되어버린 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보면 그들이 동독에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 (M3) Standpunkte des Wissenschaftsbereichs Methodik des Staatsbürgerkundeunterrichts der PH Zwickau zur Neugestaltung des Faches Staatsbürgerkunde (Thesen)

Die Zeitschrift „Geschichtsunterricht und Staatsbürgerkunde“ veröffentlichte in ihrem Januar-Heft 1/1990 zahlreiche Zuschriften zu den Problemen des Staatsbürgerkundeunterrichts nach der Wende, die alle noch im November 1989 verfaßt waren. Wir veröffentlichen daraus einen Text, der knapp die Kontur eines Lehrplanes zeichnet. Aus ihm geht auch hervor, daß hier aus dem Bereich der Hochschulen versucht wurde, Lehrplan- und Unterrichtsmaterialien für das Schuljahr 1990/91 zu organisieren, übrigens unter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wie der vorher abgedruckte „Aufruf an alle interessierten und kompetenten Kräfte zur Mitwirkung an der Umgestaltung des Staatsbürgerkundeunterrichts“ desselben Wissenschaftsbereichs (ebda. S.85) ausweist. Der Text wurde vorher schon in der Zeitschrift „Pädagogik“, Jg.44 (1989), H.12, S.959–961, veröffentlicht und trägt dort das Datum 10.11.1989.

1. Wenn sich unsere Gesellschaft grundhaft erneuert, dann muß sich folglich auch die Schule erneuern. Dies aber ist keine Frage partieller – kosmetischer – Operation. Gesellschaftliche Umgestaltung erfordert mit Notwendigkeit, die Schule als Teil und Institution der Gesellschaft *grundlegend* zu reformieren. Das muß zunächst und zu allererst Auswirkungen auf die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haben.

2. Für uns steht nicht die Frage, ob unsere Schüler eine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in Form eines eigenständigen Unterrichtsfaches benötigen oder nicht. Eine Abschaffung dieses Unterrichtsfaches würde bedeuten, daß wir als einziges entwickeltes Land auf die direkte gesellschaftliche Einwirkung auf die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ihrer jungen Staatsbürger verzichten würden. Alle Vorstellungen von einer Schule außerhalb der Gesellschaft sind eine verhängnisvolle Fiktion. Gerade weil sich die politische Landschaft heute schon differenzierter darstellt, benötigen junge Menschen eine Hilfe, um sich in ihr mit demokratischer Entscheidungskompetenz orientieren zu können.

3. Die Umgestaltung der politischen Bildung und Erziehung erfordert, die *Funktion* des jetzigen Staatsbürgerkundeunterrichts neu zu bestimmen. Wir alle meinen, daß der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die ihm überordnete Funktion als „ideologisches Schlüsselfach“ nie so recht zu erfüllen vermochte – und wohl auch nicht konnte. Wir vertreten die Auffassung, daß sich Staatsbürgerkunde von ihrer ideologischen und weltanschaulichen Zielsetzung befreien und als politi-

sches Unterrichtsfach profilieren sollte. Die politische Funktion des Faches sehen wir darin, daß Staatsbürgerkunde darauf gerichtet ist, einen Beitrag zur Bildung und Erziehung des mündigen jungen Staatsbürgers zu leisten.

4. Wenn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den mündigen jungen Staatsbürger zum Ziel hat, dann muß ihn der politische Unterricht mit jenem Wissen und Können ausrüsten, das er benötigt, um über demokratische Entscheidungskompetenz verfügen zu können. Diese Zielsetzung erfordert ein neues *Gegenstandsverständnis* unseres Faches. Bekanntlich hat sich über die Stationen: Gegenwartskunde als Unterrichtsprinzip – Gegenwartskunde als Unterrichtsfach in den oberen Klassen – Umbenennung in Staatsbürgerkunde – Ausweitung auf die Klassen 7 und 8 das heutige Gegenstandsverständnis als Vermittlung „grundlegender Erkenntnisse des Marxismus-Leninismus in enger Verbindung mit Kenntnissen über die Politik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artei“ herausgebildet. Das hat zweifelsohne die Überwindung des ursprünglich propagandistisch-agitatorischen Charakters der Gegenwartskunde zum Lehrfach Staatsbürgerkunde ermöglicht und befördert. Begleiterscheinungen dieses Profilierungsprozesses aber waren auch theoretische Überhöhungen und damit im Zusammenhang eine kaum zu bewältigende Stofffülle sowie fehlende Lebensnähe, ideologische und politische Einäugigkeiten der Lehrpläne und Lehrbücher, Staatsbürgerkunde entwickelten sich mehr und mehr zu einem „marxistisch-leninistischen Elementarkurs“ und

zur „Parteikunde“. Verbunden mit weltanschaulichen Zielsetzungen hat dies bis heute Mißverständnissen und Vorbehalten gegenüber der Staatsbürgerkunde als „Gesinnungsfach“ Vorschub geleistet.

Dieses traditionell gewachsene Funktions- und Gegenstandsverständnis unseres Faches vermag den sich abzeichnenden Demokratisierungsprozessen in unserer Gesellschaft nicht mehr zu entsprechen. Staatsbürgerkunde kann dann nicht auf der Höhe unserer Zeit sein, wenn sie sich weiterhin als „Begründungsinstanz“ für die Politik der SED darstellt. Nicht eine Partei darf als „Auftraggeber“ für die Ziele und Inhalte des Staatsbürgerkundeunterrichts fungieren – Staatsbürgerkunde muß gesellschaftlich verpflichtet sein. In diesem Sinne sehen wir die Neubestimmung des Gegenstandes unseres Faches darin, dem Schüler jenes Wissen und Können zu vermitteln und auszubilden, das er benötigt, um sich als mündige Persönlichkeit in der Gesellschaft verwirklichen zu können.

5. Ein solches Funktions- und Gegenstandsverständnis erfordert neue Lehrplaninhalte. Ohne hier schon strukturierte Lehrplaninhalte vorstellen zu wollen, halten wir die Aufnahme solcher Themenkomplexe für erforderlich, wie beispielsweise

- ökonomische, politische und soziale Grundlag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 politische Organisationen des Sozialismus in der DDR (Aufbau und Funktionsmechanismus des Staates, gleichberechtigte Behandlung der Partei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Bürgerinitiativen sowie der Kirche im Sozialismus),
- Klassen- und Sozialstruktur in der DDR,
- Grundrechte des Staatsbürgers in der DDR (bis hin zur juristischen Fixierung einzelner Gesetze, Fragen der Einhaltung der Gesetzlichkeit, des Rechtsschutzes usw.),
- Lebensweise im Sozialismus (Persönlichkeit und Kollektiv, Freundschaft, Liebe, Ehe, Familie, Freiheit, auch: Rowdytum, Kriminalität, Alkoholismus ...),
- Sozialismus und Imperialismus in der Systemauseinandersetzung (ihre Konzepte und Potenzen zur Lösung globaler Menschheitsprobleme usw.),

- Weltreligionen,
- Grundlehren des dialektischen und historischen Materialismus und andere philosophischen Konzepte (Klassen 11/12).

6. Diese zu diskutierende Neubestimmung der Lehrplaninhalte sollte die Chance bieten, unser Fach unzweideutig als Lernfach zu profilieren (Lernen als Erwerb von Wissen und Ausprägung von Können). Die schließt ein, *Lernleistungen* auch weiterhin zu zensieren. Wir können uns kein vollwertiges Unterrichtsfach vorstellen, das auf eine Zensierung der erreichten Lernleistungen verzichten kann. Im Gegenteil – Verzicht auf eine Zensur in unserem Fach würden die aktuellen Vorwürfe an unser Fach nicht abbauen, sondern verstärken! Politischer Unterricht darf nicht zu „Rederei“ degradiert werden. Politische Mündigkeit setzt Wissen und Können voraus. Und deshalb betonen wir: auch in unserem Fach muß gründlich gelernt werden!

7. Politischer Unterricht als Lernfach – das soll und darf nicht als „Wissenspaukerei“ verstanden werden. Die angestrebte Entschärfung des Stoffzeit-Problems muß die Chance bieten, ein modernes Unterrichtskonzept zu verwirklichen. Der Stil des politischen Unterrichts muß weg von monologischer Stoffvermittlung und hin zu einem wahrhaften Dialog zwischen Lehrer und Schüler bzw. zwischen den Schülern führen. Die Verstärkung kooperativer und kommunikativer Lernhandlungen muß es ermöglichen, Demokratieverhalten neu zu gestalten: Die gesellschaftliche Öffentlichkeit soll am politischen Unterricht ebenso direkt beteiligt sein, wie auch die Schüler in die gesellschaftliche Praxis „gestellt“ werden müssen.

8. Die Neukonzipierung der Lehrpläne erlaubt es u.E. auch, ein leidiges Problem bisheriger Lehrpläne zu lösen – das Problem ihres raschen moralischen Verschleißes aufgrund fehlender Aktualität. Wir halten es für erforderlich und möglich, die neuen Lehrpläne im Sinne von Rahmenplänen abzufassen, die lediglich verbindliche thematische Grundorientierungen vorgeben und auf die Fülle von Untersetzungen durch Fakten und Beispiele verzichten. Die konkrete Untersetzung der Rahmenthemen sollte dem schöpferischen Freiraum des Lehrers überstellt werden. Dazu benötigt es natürlich Materialangebote.



9. Mit den neuen Lehrplänen wächst verständlicherweise das Bedürfnis nach Lehrmaterialien. Bisherige Unterrichtshilfen, Lehrbücher und Unterrichtsmittel können dies nicht mehr leisten. Es wird jedoch nicht möglich sein, bis zum September 1990 die erforderlichen Begleitmaterialien zur Verfügung stellen zu können.

Als „Zwischenlösung“ schlagen wir deshalb vor, die Möglichkeiten der Fachzeitschrift zu nutzen. Die Fachzeitschrift sollte deshalb das Doppelheft 7/8 als Sonderdruck gestalten. Wir sind der Auffassung, daß bis spätestens zu diesem Zeitpunkt es ermöglicht werden muß, in Form eines „Kompendiums“ Materialangebote für die neuen Themenkomplexe als Vorabdruck zu veröffentlichen.

Durch zu bildende Arbeitsgruppen ist zu sichern, daß die erforderlichen Begleitmaterialien bis zum 1.7.1990 vorliegen.

10. Die Neukonzipierung des politischen Unterrichts erfordert die Neugestaltung der Aus- und Weiterbildung. Wir schlagen vor, daß in einem ersten Schritt die Möglichkeit geschaffen wird, Studenten des 4. und 5. Studienjahres auf die inhaltlichen Anforderungen der neuen Lehrpläne vorzubereiten. Dazu sind an den Ausbildungseinrichtungen studienorganisatorische Regelungen zu treffen. Die Weiterbildung der Staatsbürgerkundelehrer ist dezentral zu sichern. Die Fachberater sind dazu in zentralen Weiterbildungskursen zu befähigen.

11. Ob das bisherige Fach „Staatsbürgerkunde“ umbenannt werden sollte, ist von den konkreten Lehrplänen abhängig zu machen. Wir hielten eine Umbenennung in „Gesellschafts- und Sozialkunde“ für zweckmäßig.

(Geschichtsunterricht und Staatsbürgerkunde, Jg.32 [1990], Heft1, S.86f.)

#### **(M4) Rahmenprogramm für einen Kurs „Gestaltung des persönlichen Lebens“ für die Klassenstufen 7 und 8**

Etwa zur gleichen Zeit ist dieses Rahmenprogramm entstanden, welches die wöchentlich erscheinende „Deutsche Lehrerzeitung“ in Nr. 1/90 veröffentlichte. Erarbeitet wurde es von einer Arbeitsgruppe an der PH Güstrow. Die Autoren sagen darüber: „Langjährige theoretische Studien und praktische Erprobungen, deren Ergebnisse ihren Niederschlag in Diplomarbeiten, Dissertationen, Studien und Publikationen fanden, bildeten die Grundlage für dieses Programm“. In späteren Lehrplanentwürfen finden wir den Themenbereich „Lebensweise / Lebensgestaltung“ im Fach Gesellschaftskunde wieder. An diesem Dokument wird also eine Kontinuität aus der Zeit vor der Wende sichtbar. – Die inhaltliche Entfaltung der Themen wird hier nicht wiedergegeben.

#### **Grundanforderungen an die didaktisch-methodische und organisatorische Gestaltung des Kurses**

Entsprechend dem Hauptanliegen des Kurses ist seine didaktisch-methodische und organisatorische Gestaltung vor allem auf das *Suchen und Lösen lebens echter praktischer und theoretischer Probleme und Aufgaben* auszurichten, die den komplexen Einsatz angeeigneter oder anzueignender Kenntnisse über Inhalte der sozialistischen Lebensweise erfordern.

Die Schüler sind dabei zu unterstützen, die ihren Interessen entsprechenden Möglichkeiten aktiver Lebensgestaltung zu erkennen, sich in Über-

einstimmung von persönlicher und gesellschaftlicher Interessenlage zu entscheiden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Konsequenzen zu verantworten. Um ein hohes Maß an Interessiertheit und Motiviertheit bei den Schülern zu sichern, sind die Kursteilnehmer durchgängig in das Suchen, Planen, Durchführen und Auswerten von Aufgaben und Vorhaben einzubeziehen, aber unter dem Aspekt, diese weiterführend im persönlichen Leben umzusetzen. Da es neben der Gewinnung theoretischer Erkenntnisse um die Lösung le-



문서 번호 2

(7 학년에서 10 학년 대상)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 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의 권고

1989 년 11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 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 교육부가 국가시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독일교사신문에 발표한 것이다. 이 권고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민교육 과목은 일단 통상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학기말이 아니라 학년말에 성적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구두로 진행되던 교과최종이수시험을 생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7 학년에서 10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시민교육의 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은 사회주의 색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대상인 학생들을 앞으로 “사회주의의 개혁”을 담당할 할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경제체제, 사회 및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권고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도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 병존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동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in ihrer dialektischen Widersprüchlichkeit, mit ihren Entwicklungsproblemen. Es werden die Lösungsrichtung, die Anstrengungen um ihre Lösung, Erreichtes und noch zu Leistendes, Beförderndes und Hemmendes bewußtgemacht. Der objektiven Problemhaftigkeit des historischen Prozesses bzw.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wird zunehmend besser durch problematische Unterrichtsgestaltung, entsprochen. Nicht zuletzt wird die ganze Palette der Erfahrungen für unterschiedliche pädagogische Zwecke immer wirksamer in den Unterricht einbezogen: historische Erfahrungen, gesellschaftliche Grunderfahrungen in einer bestimmten Zeit, Lebens- und Kampferfahrungen anderer Menschen (von Antifaschisten, Aktivisten der ersten Stunde, Persönlichkeiten des Ortes und des Territoriums,

Werkträgigen des Patenbetriebes und der Patenbrigade u. a. m.), in sozialistischer Gegenwartsliteratur auf literaturästhetische Weise reflektierte Erfahrungen, die in der vielgestaltigen eigenen Lebenstätigkeit der Schüler gesammelten persönlichen Erfahrungen, das bewußt organisierte Sammeln von Erfahrungen durch die Schüler.

4. Für Staatsbürgerkunde ist wohlverstandene Aktualität kennzeichnend. Sie ist durchaus „offen“ für aktuelles Geschehen, für den ganz aktuellen Zuschnitt. Und das nicht nur in den Stunden zur freien Verfügung.

[...]

(Geschichtsunterricht und Staatsbürgerkunde, Jg. 31 [1989], H. 6, S. 469–471)

## **(M2) Vorschläge zur Arbeit in Staatsbürgerkunde, Geschichte und Geographie**

Am 16. November 1989 erhielt die in Ostberlin erscheinende Deutsche Lehrerzeitung „Vorschläge“, welche die Hauptabteilung Unterricht des Ministeriums für Volksbildung zusammen mit Bereichen des Staatssekretariats für Berufsbildung und der Akademie der Pädagogischen Wissenschaften verfaßt hatte.

Zu den Ereignissen: Am 7. November war die Regierung der DDR unter Erich Honeker zurückgetreten. Die Öffnung der Mauer erfolgte am 9. November. Am 13. November wurde Hans Modrow zum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gewählt und eine neue Regierung gebildet. Aber erst am 1. Dezember strich die Volkskammer den Führungsanspruch der SED aus der Verfassung der DDR und erst am 3. Dezember traten Egon Krenz als Parteisekretär, das Politbüro und das Zentralkomitee der SED zurück. Die „Vorschläge“ stammen also aus der Zeit, als die SED vergeblich versuchte, sich an die Spitze der Reformbewegung zu setzen, um ihre Macht zu erhalten.

Im folgenden werden nur die Ausführungen über die Staatsbürgerkunde in den Klassen 7 bis 10 wiedergegeben, nicht diejenigen über die berufsbildenden Schulen und die Fächer Geschichte und Erdkunde. Ein thematisches Angebot für die Abiturstufe wurde nicht gemacht.

### **Staatsbürgerkunde**

1. Der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wird als Unterricht in den Klassen 7–10, in der Abiturstufe (einschließlich Berufsausbildung mit Abitur) und in der Berufsausbildung im Rahmen der gültigen Stundentafel durchgeführt.

2. Für die Klasse 7 bis 10 sowie für die Berufsausbildung ohne Abitur\* werden thematische Angebote als eine mögliche von zweifellos verschiedenen Varianten unterbreitet (siehe am Ende des Abschnittes). [\* ist hier nicht abgedruckt]

3. In den Einrichtungen der Hochschulvorbereitung (einschließlich BmA) wird der Unterricht auf der Grundlage der gültigen Lehrpläne erteilt. Die Umsetzung der Lehrpläne erfolgt – wie von Lehrern dieser Einrichtungen praktiziert – mit Blick darauf, diese Schüler mit philosophischen Auffassungen und Denkrichtungen in Streitbare Weise vertraut zu machen, das Urteilsvermögen zu schärfen.

4. Im Für und Wider zur Frage der Zensurierung

unterbreiten wir den Standpunkt: Bezogen auf die Aneignung von Lerninhalten (Kenntnisse, Grundfertigkeiten etc.) kann und sollte auch zensiert werden. Das schließt zugleich ein, daß gerade heute mehr denn je sorgsam mit der Zensurierung im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umgegangen werden sollte. Auf die Erteilung von Zeugniszensuren im Halbjahr kann verzichtet werden. Zum Jahresende sollte auf die Erteilung einer Zeugniszensur hingearbeitet werden. In der Berufsausbildung sollte die Abschlußzensur nur auf Wunsch des Lehrlings in das Gesamtprädikat der Facharbeiterprüfung einbezogen werden.

5. Wir halten es für zweckmäßig, auf die mündlichen Abschlußprüfungen zu verzichten. Das gilt auch für die Berufsausbildung. Mündliche Reifeprüfungen im Fach Staatsbürgerkunde sollten nach dem Prinzip der freiwilligen Entscheidung der betreffenden Schüler/Lehrlinge erfolgen.

#### *Thematisches Angebot für den Unterricht im Schul- und Lehrjahr 1989/90*

Staatsbürgerkunde soll und kann einen unverzichtbaren Beitrag zur Herausbildung mündiger Staatsbürger leisten, die sich in den Willens- und Entscheidungsprozeß auf allen Ebenen und zu allen sie berührenden Problemen einbringen und verantwortungsbewußt zur Lösung der bei der Erneuerung des Sozialismus vor uns liegenden komplizierten Aufgaben beitragen wollen.

Das verlangt, der Verfassung der DDR entsprechend, unterschiedliche Abschaunungen zu akzeptieren und auf dieser Grundlage die Fähigkeit der Schüler zur politischen Standpunkt- und Meinungsbildung zu entwickeln. Das schließt ein, daß sich die Schüler und Lehrlinge im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entsprechende Kenntnisse über ihren Staat aneignen.

#### *Klassen 7 bis 10*

##### *Klasse 7*

– Ökonomische Grundlage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in der DDR (Volkseigentum in der Industrie und in anderen Bereichen, 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privates Eigentum von Handwerkern und Händlern); die in der DDR bestehenden sozialen Klassen und

Schichten – übereinstimmende Grundinteressen und spezifische Interessen

- Das Ringen der Werktätigen um Planerfüllung, um Sicherung der Versorgung der Bevölkerung, um Erfüllung der Exportverpflichtungen – Leistungen, Probleme, Lösungsansätze
- Die enge Verbindung der Volkswirtschaft der DDR mit der anderer sozialistischer Länder, insbesondere mit der UdSSR, bestehende Entwicklungsprobleme
- Die Wirtschaftsbeziehungen zu kapitalistischen Ländern und zu jungen Nationalstaaten
- Der wechselseitige Zusammenhang von Produktion und Konsumtion; der Grundsatz, daß nur verbraucht werden kann, was zuvor produziert wurde
- Soziale und kulturelle Errungenschaften des Sozialismus in der DDR, ihre weitere Sicherung; Soziale Sicherheit und Leistungsprinzip; Bewahrung des humanistischen kulturellen Erbes in der DDR; Kultur im gesellschaftlichen Leben

##### *Klasse 8*

-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in der DDR; gemeinsame und spezifische Interessen; neue gesellschaftliche Kräfte und ihre Ziele
- Die Entwicklung des Sozialismus als Demokratie; neue Erscheinungen und Prozesse in der DDR
- Die entscheidende Rolle der Volkskammer, ihre neue Arbeitsweise, wichtige Beschlüsse; andere Organe demokratischer Machtausübung
- Rechte und Pflichten des Staatsbürgers (unter Bezugnahme auf ausgewählte Artikel der Verfassung)
- Die Beziehungen von Staat und Kirche in der DDR
- DDR und BRD als politisch und ökonomisch unterschiedliche Staaten, die sich historisch herausgebildet haben und ein wichtiges Element der Nachkriegsordnung in Europa sind; ihre Zugehörigkeit zu unterschiedlichen Bündnissystem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die Sicherung friedlicher Koexistenz und gegenseitig vorteilhafter Kooperation; die histo-

rische Verpflichtung, daß von deutschem Boden nie wieder Krieg ausgeht

Klassen 9 und 10 (gleiche Grundvariante)

- *Der Sozialismus und die Menschheitsentwicklung*: Der Sozialismus als historische Entwicklungsstufe der Menschheit, die sich mit Notwendigkeit aus dem Wirken des allgemeinsten Bewegungs- und Entwicklungsgesetzes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ergibt, und die mit Notwendigkeit in der geschichtlichen Abfolge der Gesellschaftsordnungen den Kapitalismus ablöst; die nicht auszuschließende räumlich und zeitlich begrenzte Möglichkeit rückläufiger Prozesse, die Welt des Sozialismus in einer tiefgreifenden Umbruchs- und Erneuerungsphase – das Scheitern eines administrativ-bürokratischen Modells des Sozialismus; die Absicht imperialistischer Kreise, die mit Wandlungsprozessen im Sozialismus einhergehenden Probleme und Widersprüche zu einer strategischen Niederlage des Sozialismus zu nutzen; enge Zusammenarbeit mit den anderen sozialistischen Ländern und Kooperation mit kapitalistischen Ländern als Erfordernisse einer Erneuerung des Sozialismus in der DDR – Internationalisierung des Wirtschaftslebens, Druck globaler Probleme, Beziehungen DDR–BRD.
- *Der Sinn des Sozialismus*: die umfassende Gewährleistung und Förderung des Wohles der Werktätigen, der Befriedigung ihrer materiellen und kulturellen Bedürfnisse, der Selbstverwirklichung jedes Menschen unabhängig von der sozialen Herkunft, von weltanschaulichen oder religiösen Anschauungen, von Geschlecht und Rasse; die Orientierung der Erneuerung des Sozialismus in der DDR an dem im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formulierten Menschheitsideal, an Stell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mit ihren Klassen und Klassengegensätzen eine Gesellschaft zu schaffen, „Worin die freie Entwicklung eines jeden die Bedingung für die freie Entwicklung aller ist“;
- *Die Produktion materieller Güter als Grundlage für die Existenz und Entwicklung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die Allgemeingültigkeit dieses Sachverhaltes unabhängig von der Formierung der Menschen in dieser oder jener Gesellschaftsordnung (Reaktivierung); das aus den sozialistischen Produktionsverhältnissen sich ergebende ökonomische Grundgesetz des Sozialismus, ökonomisches Grundgesetz des Sozialismus und Sinn des Sozialismus; konkret-historische Bedingungen und Erfordernisse der Realisierung des ökonomischen Grundgesetzes des Sozialismus in der DDR (beschleunigte Steigerung der Arbeitsproduktivität, hauptsächliche Faktoren; planmäßige proportionale Entwicklung der Volkswirtschaft, Planung und Markt; soziale Sicherheit – Leistung – soziale Gerechtigkeit) – die Wirtschaftsreform; das sich aus den kapitalistischen Produktionsverhältnissen ergebende Mehrwertgesetz als ökonomisches Grundgesetz des Kapitalismus.

- *Sozialstruktur und politische Organisation des Sozialismus in der DDR*: Arbeiterklasse, Klasse der Genossenschaftsbauern, Intelligenz, Handwerker und Gewerbetreibende als jene sozialen Gruppierungen, die die Sozialstruktur der DDR bilden; gemeinsame und spezifische Interessen dieser sozialen Gruppierungen; das Bestehen traditionell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sowie sich neu herausbildende politische Vereinigungen und demokratische Bewegungen als Ausdruck und zur Durchsetzung einer Vielfalt von Interessen; der Sozialismus als Konsens aller dieser gleichberechtigten Kräfte, ihre spezifischen Ziele und Plattformen für einen erneuerten Sozialismus; traditionelle Bündnisbeziehungen und sich entwickelnde neue Formen der Gestaltung dieser Beziehungen; Wesen und Funktionen des sozialistischen Staates; das Erfordernis, einen sozialistischen Rechtsstaat auszugestalten, der von den Grund- und Menschenrechten ausgeht und die Gesellschaft durchgehend auf der Grundlage des Rechts organisiert – die Reform des politischen Systems. [...]

(Deutsche Lehrerzeitung 47/1989, S. 8)





문서 번호 3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 - (동독) 교육부의 견해

1989 년 11 월 29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동독 교육부는 이 견해서에서 성숙한 국가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시민 교과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국가시민 교과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현 학년도에 있어 현행 교과시간은 계속 유효하며, 동년 하반기의 상세 계획은 1990 년 말까지 공표될 것이다. 1990/91 년도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토론을 위한 더 많은 사항을 밝힐 것이다.

출처: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zialistisches Recht korrespondiert. Die Konzeption dieses Lehrgangs werden wir zur Diskussion stellen.

[...]

*Quelle:* DLZ 45/1989, S. 5.

## 10.4 *Zur Diskussion des Staatsbürgerkunde-Unterrichts*

### *Standpunkt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1989)*

Staatsbürgerliche Erziehung ist heute mehr denn je künftig unverzichtbar. Sie ist eine unabdingbare Voraussetzung für den mündigen Staatsbürger, für den sich in der breiten gesellschafts- und bildungspolitischen Debatte nahezu alle in unserem Lande aussprechen und der eine wesentliche Bedingung für die Erneuerung des Sozialismus in der DDR darstellt.

Deshalb sollte heute und künftig die staatsbürgerliche Bildung so gestaltet werden, daß sie von allen auf dem Boden der Verfassung der DDR stehenden Menschen, unabhängig der politischen, weltanschaulichen und religiösen Anschauungen, annehmbar ist und die Heranwachsenden befähigt werden, ihre Verantwortung als Staatsbürger, als aktive Gestalter der Gesellschaft wahrnehmen zu können.

Für das laufende Schuljahr gilt: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wird in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und in der Berufsausbildung im Rahmen der gültigen Stundentafel erteilt. Zur Gestaltung des Unterrichts sind in der Deutschen Lehrerzeitung Nr. 47/89 inhaltliche Anregungen sowie Standpunkte zur Zensurierung, zu Halbjahres- und Endnoten sowie zu den Prüfungen veröffentlicht worden. Bis Ende Januar 1990 liegt die präzisierte Stundentafel für das zweite Schulhalbjahr vor.

Für das Schuljahr 1990/91 werden durch das Ministerium weiterführende Überlegungen zum gesellschaftlichen Unterricht zur öffentlichen Diskussion gestellt.

*Quelle:* National-Zeitung vom 29. November 1989.



문서 번호 4

직업적 안정을 위한 시민재교육령

1990 년 2 월 8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최고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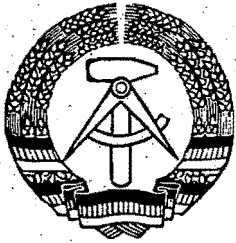
내용:

이 문서는 1990 년 2 월 초에 동독의 최고인민회의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임금부 및 그 하부 기관은 매년 필요한 직업전환교육 조치의 범위 및 체계에 대해 조사한다. 교육부와 산하 기관들은 노동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직업전환을 위한 학습과 교육을 내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공해야 한다. 직업전환교육 기간 중 시민들은 정해진 실업지원금을 받는다. 사업체들과 교육기관들은 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11 - Ausgabetag: 2. März 1990





# GESETZBLATT

##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83

1990

Berlin, den 2. März 1990

Teil I Nr. 11

Tag	Inhalt	Seite
8. 2. 90	Verordnung über die Umschulung von Bürgern zur Sicherung einer Berufstätigkeit	83
22. 2. 90	Verordnung zur Arbeit mit Personalunterlagen	84
22. 2. 90	Dritte Verordnung über den Erholungsurlaub	85
21. 2. 90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 Durchführung der Genehmigung -	85
21. 2. 90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 Grundsätze der Preisbildung -	87
21. 2. 90	Drit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Grün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in der DDR - Vorschriften für Rechnungsführung und Statistik -	88
31. 1. 90	Anordnung Nr. 2 über die Facharbeiterprüfung	90

### Verordnung über die Umschulung von Bürgern zur Sicherung einer Berufstätigkeit vom 8. Februar 1990

#### § 1

##### Geltungsbereich

Diese Verordnung gilt für

- Bürger der DDR und ausländische Bürger mit ständigem Wohnsitz in der DDR, denen keine zumutbare Berufstätigkeit vermittelt werden kann,
- zentrale und örtliche Staatsorgane.

##### Ziel der Umschulung

#### § 2

Umschulungsmaßnahmen sind mit dem Ziel durchzuführen, die berufliche Mobilität der Bürger zu erhöhen und dadurch die Wiederaufnahme einer Berufstätigkeit zu unterstützen.

#### § 3

Durch das Ministerium für Arbeit und Löhne und seine Organe sind jährlich der Umfang und die Struktur der notwendigen Umschulungsmaßnahmen zu ermitteln. Auf dieser Grundlage sind durch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seine Organe entsprechende Angebotskataloge bzw. Studien- und Lehrprogramme für die Umschulung auszuarbeiten und den Ämtern für Arbeit zu übergeben.

#### § 4

##### Information und Beratung

Die Bürger sind durch die Ämter für Arbeit über die Angebote der beruflichen Umschulung und die sich daraus ergebenden Möglichkeiten zur Wiederaufnahme einer Berufstätigkeit umfassend zu informieren und zu beraten.

#### § 5

##### Finanzielle Unterstützung der Bürger

(1) Für die Dauer der Umschulung werden finanzielle Zuwendungen nach den Bedingungen und in der Höhe gemäß der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staatlicher Unterstützung und betrieblicher Ausgleichszahlung an Bürger während der Zeit der Arbeitsvermittlung gezahlt.

(2) Das Amt für Arbeit erstattet die notwendigen Kosten, die dem Bürger durch die Umschulungsmaßnahme entstehen, insbesondere Lehrgangsgebühren, Kosten für Lernmittel, Fahrtkosten sowie Kosten der Unterkunft und Mehrkosten der Verpflegung bei auswärtiger Unterbringung. Das gilt nur für Bürger, die in Übereinstimmung mit dem zuständigen Amt für Arbeit an einer Umschulungsmaßnahme teilnehmen.

(3) Die dem Bürger vom Amt für Arbeit erstatteten Kosten können zurückgefordert werden, wenn der Bürger durch schuldhaftes Verletzung seiner Pflichten die Umschulungsmaßnahme nicht beendet oder die Leistung ungerechtfertigt bezogen hat.

#### § 6

##### Finanzielle Unterstützung der Betriebe und Bildungseinrichtu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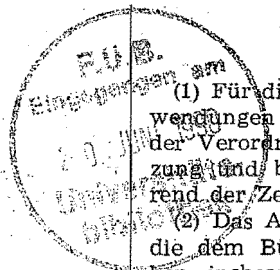
Das Amt für Arbeit kann Betrieben und Bildungseinrichtungen auf Antrag die Kosten einschließlich Honorarkosten erstatten, die durch Umschulungsmaßnahmen entstehen und durch Lehrgangsgebühren nicht abgedeckt werden.

##### Grundsätze zur Durchführung der Umschulung

#### § 7

(1) Die Umschulung ist ausgehend von den Erfordernissen des Arbeitsmarktes nach Inhalt, Form und Methode so zu gestalten, daß die geforderte Fachkompetenz und Leistungsfähigkeit für eine neue Arbeitsaufgabe erworben werden kann.

(2) Ausgehend vom Ziel sowie unter Beachtung der Arbeits-, Berufs- und Lebenserfahrungen der Teilnehmer ist



die Dauer der Umschulung möglichst kurz zu bemessen. Sie sollte 12 Monate nicht überschreiten. Behinderte sind besonders zu unterstützen.

(3) Die Umschulung ist in Einheit von berufstheoretischer und -praktischer Befähigung zu realisieren. Sie erfolgt grundsätzlich in Lehrgängen an Bildungseinrichtungen, wie z. B. an Universitäten, Hoch- und Fachschulen, Betriebsakademien und Betriebsschulen, einschließlich der für den berufspraktischen Teil der Umschulung notwendigen Lehrwerkstätten und Kabinette, Kombinatsschulen, Kreislandwirtschaftsschulen, kommunalen Berufsschulen und Volkshochschulen.

In die Umschulung sind Möglichkeiten des praxisnahen Trainings einzubeziehen.

(4) Die Umschulung ist mit einer Prüfung abzuschließen. Über den erfolgreichen Abschluß erhält der Teilnehmer einen Nachweis. Dieser Nachweis ist durch die Betriebe bei Vermittlung in eine der Umschulung entsprechende Arbeitsaufgabe im Zusammenhang mit Nachweisen über bisherige Qualifikationen als Grundlage für die Entlohnung anzuerkennen.

#### § 8

(1) Für Facharbeitertätigkeiten werden Bürger umgeschult gemäß

- Anordnung vom 17. September 1984 über den Erwerb eines Facharbeiterabschlusses bei gesellschaftlich notwendigem Berufswechsel, wenn sie bereits über einen Facharbeiterabschluß verfügen,
- Verordnung vom 21. Dezember 1984 über die Facharbeiterberufe (GBl. I 1985 Nr. 4 S. 25), wenn sie noch keinen Facharbeiterabschluß besitzen.

(2) Bürger mit Hoch- oder Fachschulabschluß sind für Arbeitsaufgaben anderer Hoch- und Fachschulberufe auf der Grundlage entsprechender Studienprogramme umzuschulen.

(3) Bürger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die für eine Tätigkeit als Meister umgeschult werden, sind ausschließlich auf der Grundlage der Fachbildungsprogramme zum Meisterabschluß zu führen. Können sie keinen Facharbeiterabschluß nachweisen oder entspricht der vorhandene Facharbeiterberuf nicht der gewählten Meisterfachrichtung, ist die ~~Aneignung des notwendigen beruflichen Wissens und Könnens~~ in die Umschulung einzubeziehen.

Werden Meister für artfremde Meisterfachrichtungen umgeschult, ist analog zu verfahren.

(4) Umschulungsmaßnahmen zum Erwerb von Zusatzqualifikationen und Befähigungsnachweisen sind unter Nutzung zentraler Weiterbildungsprogramme durchzuführen.

#### Schlußbestimmungen

##### § 9

(1)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ieser Verordnung erläßt der Minister für Arbeit und Löhne.

(2)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r Finanzierung erläßt der Minister der Finanzen und Preise.

##### § 10

Diese Verordnung tritt am 1. März 1990 in Kraft.

Berlin, den 8. Februar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ns Modrow  
Vorsitzender

Prof. Dr. Dr. Emons  
Minister für Bildung

Hannelore Mensch  
Minister für Arbeit und Löhne

## Verordnung zur Arbeit mit Personalunterlagen vom 22. Februar 1990

Zur Gewährleistung des Schutzes der persönlichen Daten der Werktätigen in den Staatsorganen, Kombinat, Betrieben, Genossenschaften, Dienststellen und Einrichtungen der DDR wird folgendes verordnet:

#### § 1

##### Geltungsbereich

Diese Verordnung gilt für die zentralen und örtlichen Staatsorgane, Kombinate, Betriebe, Genossenschaften, Dienststellen und Einrichtungen (nachfolgend Organe und Betriebe genannt) sowie für Werktätige.

#### § 2

##### Definition und Inhalt

Personalunterlagen sind betriebliche Arbeitsmittel, denen personenbezogene Angaben zugrunde liegen. Sie enthalten eine Sammlung schriftlicher Dokumente, die vom Werktätigen selbst vorgelegt wurden bzw. während seiner Berufstätigkeit mit seiner Kenntnis bzw. Zustimmung zum Bestandteil von Personalunterlagen erklärt wurden.

#### § 3

##### Verantwortung der Organe und Betriebe

(1) Anstelle der bisherigen Personalakten führen die Organe und Betriebe entsprechend den betrieblichen Erfordernissen über ihre Werktätigen Personalunterlagen.

Dazu gehören vor allem:

- ein Personalbogen mit Lichtbild
- ein Lebenslauf
- letzte Beurteilung/Leistungseinschätzung
- Qualifikationsnachweise
- Arbeitsverträge und dazugehörige Änderungsverträge
- Gesundheitszeugnis (Nachweis der gesundheitlichen Eignung für die jeweilige Tätigkeit)
- 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 (nur bei Führungskräften).

(2) Die Leiter der Organe und Betriebe haben zu gewährleisten, daß dem Werktätigen auf Ersuchen Einsicht in seine Personalunterlagen zu gewähren ist.

(3) Die Leiter der Organe und Betriebe sichern, daß

- Personalunterlagen nur während der Tätigkeitsdauer im Organ oder Betrieb geführt werden;
- eine Einsichtnahme in die Personalunterlagen durch dritte Personen nur mit Zustimmung des Werktätigen möglich ist;
- nach Beendigung der Tätigkeit der Werktätige seine Personalunterlagen zur weiteren persönlichen Verwendung bzw. zur Übergabe an eine neue Arbeitsstelle ausgehändigt erhält und
- die Weitergabe von persönlichen Daten der Werktätigen außerhalb des Organes oder Betriebes nur mit Zustimmung des Werktätigen erfolgt.

(4) Die Führung und sichere Aufbewahrung der Personalunterlagen erfolgt in den Organen und Betrieben in der Regel durch die verantwortlichen Mitarbeiter in den Personalbereichen mit größter Gewissenhaftigkeit und unter Wahrung strengster Vertraulichkeit.

(5) Die Leiter der Organe und Betriebe haben das Recht, von den Werktätigen Dokumente und Informationen zu verlangen, soweit sie für die Aktualisierung der Personalunterlagen erforderlich sind.

(6) Die Organe und Betriebe sind berechtigt, nicht mehr aktuelle Dokumente und Unterlagen aus den Personalunterlagen zu entfernen und dem Werktätigen zurückzugeben. Eintragungen über Disziplinarmaßnahmen sind nach Löschung gemäß § 258 des Arbeitsgesetzbuches aus den Personalunterlagen zu entfernen. Das gilt analog bei Tilgung gerichtlicher Strafen.



## 문서 번호 5

### 동독내각회의 의결안 - 노동력의 [분야별] 조정 및 노동력재교육 조치의 현황에 대해

1990 년 2 월 13 일

담당자 / 기관: 동독내각회의; 노동알선 실무단 책임자, 하인트 슈미트

#### 내용:

이 문서는 1990 년 초에 동독 노동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미 동독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 1 월 31 일까지 145,030 명의 노동력이 해고되었다. 이 수치는 환경과 수익성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였거나 구조조정과 필요한 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들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 중 107,575 명은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았고, 나머지 37,455 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총 158,602 개의 일자리가 비어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은 베를린이다. 베를린에 현재 고용가능한 일자리는 14,782 개인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9,592 명이다. 방출된 노동력의 대부분은 “전문직 및 대학졸업자”로 불리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 베를린에 이 그룹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단지 1,968 개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대학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아주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지원자 대 일자리 수의 비율이 줄(Suhl) 지역의 경우 1:1.3 인데 반해, 베를린에서는 1:8 이다.

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일자리가 과대 공급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노동력의 분포가 지역의 사업체 분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단은 방출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직업전환교육을 수료한 후 얻을 수 있는 직업과 직장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다.

노동력 및 자격능력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면모를 쇄신하게 될 노동청과 협력 하에 노동시장연구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Sammlung (Dokumentati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Entwicklung der Arbeitsverwaltung in Deutschland (HdBA Mannheim): SEAD-BA 8.4 / 618



**Sitzungsmaterial**

- persönlich -

V 224/90

60 . Ausf. 13 Seiten

Titel der Vorlage:

Information über den Stand der Arbeitskräfte-  
lenkung und -freisetzung sowie Maßnahmen zur  
Umschulung von Arbeitskräften

Einreicher der Vorlage:

Leiter der Arbeitsgruppe zur Koordinierung  
der Arbeitsplatzvermittlung  
Dr. Heinz Schmidt

Grund der Einreichung:

Beschluß des Ministerrates vom  
25. Januar 1990

Berlin, den 13. Februar 1990

zur Behandlung der Vorlage  
sind einzuladen:

Dr. Heinz Schmidt  
Leiter der Arbeitsgruppe zur Koordinierung  
der Arbeitsplatzvermittlung

die Vorlage wurde  
ausgearbeitet von:

der Arbeitsgruppe zur Koordinierung der Ar-  
beitsplatzvermittlung unter der Leitung von  
Dr. Heinz Schmidt

Vorschlag für den  
verteiler:

Mitglieder des Ministerrates  
Vorsitzende der Räte der Bezirke und  
Kreise  
Oberbürgermeister von Berlin  
Leiter anderer zentraler Staatsorgane  
Leiter der Personalabteilung beim  
Ministerrat der DDR

Beschlußvorschlag:

1. Die Information über den Stand der Arbeitskräftelenkung und -freisetzung sowie Maßnahmen zur Umschulung von Arbeitskräften wird zur Kenntnis genommen (Anlage).
2. Zur effektiven Nutzung des vorhandenen Arbeitsvermögens mit dem Ziel der Sicherung eines Leistungszuwachses in der Produktion und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sind territoriale Arbeitsplatzbeschaffungsprogramme zu erarbeiten.

Verantwortlich: Vorsitzende der Räte der Bezirke  
 Minister und Leiter des Wirtschaftskomitees  
 zuständige Minister

Termin: 5. März 1990

3. Zur weiteren Qualifizierung der Arbeitsplatzvermittlung für Hoch- und Fachschulkader sind zentrale Umschulungsmaßnahmen zu erarbeiten, dafür zuständige Bildungseinrichtungen festzulegen, ~~und künftige Einsatzgebiete aufzuzeigen.~~  
 Diese Beratungsunterlagen sind den Ämtern für Arbeit kurzfristig zu übergeben.

Verantwortlich: Minister für Bildung  
 Minister und Leiter des Wirtschaftskomitees  
 Minister für Arbeit und Löhne

Termin: 16. März 1990

4. Mit Unterstützung der Arbeitsgruppe zur Koordinierung der Arbeitsplatzvermittlung sind das Amt für Arbeit und Löhne Berlin sowie die Ämter für Arbeit in den Stadtbezirken zur besseren Lösung der gewachsenen neuen Aufgaben entsprechend zu formieren.

Dazu ist der Personalbestand an kompetenten Mitarbeitern und Leitern um 351 zu erhöhen und die Unterbringung in geeigneten Objekten zu sichern.

Verantwortlich: Oberbürgermeister von Berlin  
 Minister für Arbeit und Löhne  
 Minister für Finanzen und Preise  
 Arbeitsgruppe zur Koordinierung der Arbeitsplatzvermittlung

Termin: März 1990

5. Es ist eine Konzeption zur Entwicklung der Arbeitsmarktforschung in der DDR mit dem Ziel der aktiven Einflußnahme auf die Gestaltung der künftigen Arbeitsmarktpolitik und die Ausarbeitung von Beschäftigungsprogrammen zu erarbeiten.

Verantwortlich: Minister und Leiter des Wirtschaftskomitees  
 Minister für Arbeit und Löhne

Termin: 12. März 1990

27297  
 Stand jetzt

Anlage

Information über den Stand der Arbeitskräftefreisetzung und -lenkung sowie Maßnahmen zur Umschulung von Arbeitskräften

---

Durch Veränderung der politischen Strukturen, der personellen Reduzierung in Staatsorgan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sowie durch Verringerung der Leitung und Verwaltung in Kombinat und Betrieben sind in der Republik bis 31.01.1990 145 030 Werktätige freigesetzt worden.

In diesen Zahlen sind noch nicht die Auswirkungen der aus ökologischen und Rentabilitätsgründen vorgesehenen Produktionsstillegungen, anderer Strukturveränderungen sowie von notwendigen Rationalisierungsmaßnahmen enthalten.

Von den freigesetzten Werktätigen haben insgesamt 107 575 eine andere Arbeit aufgenommen.

An 37 455 Werktätige sind noch Arbeitsplätze zu vermitteln. Dafür standen per 31.01.1990 insgesamt 158 602 freie Arbeitsplätze zur Verfügung.

Insgesamt 7 440 Bürger, davon 1 031 Frauen, waren nach Angaben der Ämter für Arbeit am 31.01.1990 ohne Arbeitsrechtsverhältnis. Bei mehr als 4 000 Bürgern ist das auf Strukturveränderungen zurückzuführen.

Besonders kompliziert ist die Lage in Berlin. Im gleichen Zeitraum wurden 58 462 Werktätige freigesetzt. 38 870 haben inzwischen eine andere Arbeit begonnen. Für 19 592, in der Mehrzahl Hoch- und Fachschulkader, sind noch neue Arbeitsplätze zu vermitteln. Dafür stehen nur 14 782 bei den Ämtern für Arbeit gemeldete freie Arbeitsplätze, also 4 810 weniger als Arbeitssuchende, zur Verfügung.

0% HK

4121 HK  
8200 FK

3140 HK

115 D...

124 HK

Die Anzahl der freien Arbeitsplätze für Hoch- und Fachschulkader beträgt 1 968. Insgesamt 196 Bürger, davon 98 Frauen, waren in Berlin ohne Arbeitsrechtsverhältnis.

Immer mehr Bürger suchen die Ämter für Arbeit auf und erwarten Unterstützung und Hilfe bei der Lösung ihrer Probleme. Das stellt entschieden höhere Anforderungen an das Amt für Arbeit und Löhne beim Magistrat von Berlin, an die Ämter für Arbeit in den Stadtbezirken. Um diesen und künftigen Anforderungen gerecht zu werden, sind die genannten Ämter ohne Verzug personell und materiell zu stärken sowie bessere räumliche Bedingungen für die Arbeit mit den Bürgern zu schaffen.

Die Situation bei der Arbeitsplatzvermittlung ist weiter durch folgende Probleme gekennzeichnet:

- Im Vergleich zur Information über den Stand der Arbeitskräftefreisetzung und -lenkung vom 25.01.1990 ist die Anzahl der gemeldeten freien Arbeitsplätze um rd. 11 % zurückgegangen, obwohl die große Zahl von Übersiedlern in die BRD im Monat Januar, die Rückführung von 12 000 Angehörigen der NVA aus Produktionseinsätzen und die Auswirkungen der Amnestie auf eine tatsächlich bedeutend höhere Anzahl von freien Arbeitsplätzen schließen lassen. Damit wird deutlich, daß die Betriebe freie Arbeitsplätze in Reserve halten, weil noch keine Klarheit über ihr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besteht.
- Gestützt auf Analysen der Ämter für Arbeit, Informationen einiger Ministerien und auf eigene Untersuchungen muß eingeschätzt werden, daß die Arbeitsplatzvermittlung an Hoch- und Fachschulkader zunehmend schwieriger wird. Das resultiert vor allem aus dem Rückgang freier Arbeitsplätze für Hoch- und Fachschulkader. Hinzu kommt, daß überwiegend Gesellschafts- und Wirtschaftswissenschaftler freigesetzt und vor allem technische und medizinische Hoch- und Fachschulkader gesucht werden.

Im Durchschnitt der Republik kommen auf einen freien Arbeitsplatz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2 freigesetzte Werk tätige dieser Qualifikationsstufe. Die Differenziertheit dieses Verhältnisses in den Bezirken reicht von 1 : 1,3 im Bezirk Suhl bis 1 : 8,0 in Berlin (Anhang 1). Daraus ist ersichtlich, daß auch hier in Berlin die größten Probleme zu bewältigen sind.

- Im Unterschied zur Lage bei Hoch- und Fachschulkadern gibt es ein Überangebot an freien Arbeitsplätzen für Facharbeiter. Im Republikdurchschnitt stehen gegenwärtig für einen freier werdenden Facharbeiter 12,6 Arbeitsplätze zur Verfügung. Die Differenziertheit in den Bezirken ist im Anhang 2 dargestellt.

In einigen Territorien kann das Überangebot an freien Arbeitsplätzen mit den territorial vorhandenen Arbeitskräften nicht gedeckt werden.

Hier wird der Widerspruch zwischen Produktionsstandortkonzentration und territorial vorhandenem Arbeitsvermögen sichtbar. Darüberhinaus weisen die Ämter für Arbeit auf zunehmend größere Probleme bei der Arbeitsplatzvermittlung für weibliche Werk tätige mit Facharbeiterberufen hin.

- Zur Umschulung von Facharbeitertätigkeiten gibt es insgesamt gute Voraussetzungen. Die Ämter für Arbeit verfügen in der Regel über aktuelle, aussagekräftige Übersichten über den Bedarf an Arbeitskräften und die vorhandenen Möglichkeiten der Qualifizierung in den Betrieben ihres Territoriums. In wachsendem Maße werden diese Möglichkeiten auch von den Hoch- und Fachschulkadern genutzt. Das trifft z.B. auf Betriebe und Einrichtungen des Verkehrswesens,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des Handels und Gaststättenwesens, des Gesundheitswesens und auch des Bauwesens sowie der metallverarbeitenden Industrie zu.

An der Schaffung von Umschulungsmöglichkeiten für Hoch- und Fachschulkader wird gearbeitet. So werden z.B. bereits an der



Handelshochschule Leipzig, a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resden, an der Friedrich Schiller Universität Jena und an der Hochschule für Ökonomie "Bruno Leuschner" in Berlin entsprechende Kurse durchgeführt.

Weitere Umschulungsmaßnahmen werden vorbereitet (Anhang 3).

Die Arbeit wird insgesamt dadurch erschwert, daß durch die zuständigen Minister bisher nur unvollständige Aussagen zu den neuen Anforderungen an die Arbeitskräfte- und Qualifikationsstruktur, insbesondere auch für Hoch- und Fachschulkader gemacht werden.

Die in Verantwortung des Wirtschaftskomitees auf der Grundlage des Ministerratesbeschlusses vom 21.12.1989 über "Maßnahmen zum Einsatz und zu notwendigen Umschulungen freigesetzter Mitarbeiter..." geleistete Arbeit zur Schaffung zusätzlicher Arbeitsplätze in den Bereichen Gesundheitswesen, Umweltschutz sowie Altbausanierung, Wohnungswirtschaft, Stadtwirtschaft und andere Dienstleistungen hat erste Ergebnisse erbracht.

So werden z.B. im Bereich des Gesundheits- und Sozialwesens 6 280 Arbeitsplätze für Hochschulkader und 15 680 Arbeitsplätze für Fachschulkader geschaffen. Das betrifft solche Aufgabengebiete wie Schwestern, Pfleger, Physiotherapeuten, Laborkräfte, Fürsorgerinnen, Sozialarbeiter sowie Kräfte für die Wartung und Instandhaltung der eingesetzten Technik. Weitere Umschulungsangebote liegen aus den Bereichen Naturschutz,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 mit 1 186 zusätzlichen Arbeitsplätzen vor.

Damit wird die Zielstellung des Beschlusses des Ministerrates vom 21.12.1989 jedoch noch nicht erfüllt.

In vielen Räten gibt es konkrete Vorstellungen über Anzahl und Art notwendiger neuer Arbeitsplätze in diesen Bereichen, die jedoch noch nicht ihren Niederschlag in entsprechenden Konzeptionen gefunden haben. Dieser Zustand ist mit dem Ziel der Entwicklung regionaler Programme der Arbeitsplatzbeschaffung kurzfristig zu überwinden.

- Die lt. Beschluß des Ministerrates vom 07.12.1989 von den Ministern auszuarbeitenden Konzeptionen zum effektiven Wiedereinsatz ausscheidender Mitarbeiter einschließlich notwendiger Qualifizierungsmaßnahmen liegen, mit Ausnahme des Ministeriums für Maschinenbau, noch nicht vor. Andererseits werden Entlassungen angekündigt, ohne daß Konzeptionen der Kombinate und Betriebe zur Vorbereitung von Werkträgern auf neue Tätigkeiten erarbeitet sind.

Es gibt z.B. aus dem Ministerium für Leichtindustrie Informationen, wonach gegenüber bisher durchschnittlich 15 % Freisetzungen aus Leitungen und Verwaltungen der Kombinate und Betriebe jetzt bis zu 75 % zu erwarten sind. Das betrifft in diesem Bereich 90 000 bis 135 000 Werkträgern.

Auch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Maschinenbau hat der Generaldirektor des Kombinates Fortschritt Landmaschin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auslösung der Kombinateleitung aus dem bisherigen Stammbetrieb VEB Erntemaschinen Neustadt die Freisetzung von Leitungs- und Verwaltungspersonal veranlaßt. Das betrifft 80 % der Kombinateleitung, für die es im eigenen Verantwortungsbereich keine Einsatzmöglichkeiten mehr gibt.

Diese Entwicklung und Veröffentlichungen in den Medien über zu erwartende Massenarbeitslosigkeit tragen dazu bei, daß sich bei vielen Bürgern Unsicherheit und Existenzangst einstellen. Das wird insbesondere deutlich bei den individuellen Gesprächen mit Bürgern in den Ämtern für Arbeit.

- Es muß eingeschätzt werden, daß es zum gegenwärtigen Zeitpunkt in den Ministerien, Kombinat, Betrieben und territorialen Staatsorganen noch keine kurzfristig wirksam werdenden Maßnahmen zur Ermittlung des tatsächlichen Arbeitskräfte- und Qualifikationsbedarfs für die künftigen Erfordernisse gibt. Es wird deshalb der Aufbau einer Arbeitsmarktforschung unter Einbeziehung der neu profilierten Ämter für Arbeit in der DDR für notwendig gehalten.

Anhang 1Anzahl freier Arbeitsplätze für Hoch- und Fachschulkader und  
freigesetzter bzw. -werdender Hoch- und Fachschulkader

(Stand per 31.01.1990)

DDR/Bezirk	Arbeitsplätze für HF-Kader	freigesetzte bzw. freier- dende und noch zu ver- mittelnde HF- Kader	Verhältnis zw. freien Arbeitsplatz u. HF-Kadern
insgesamt	13 473	27 405	1 : 2,0
darunter			
Berlin	1 970	15 670	1 : 8,0
Erfurt	943	1 981	1 : 2,1
Frankfurt/O	432	1 001	1 : 2,3
Gera	508	773	1 : 1,5
Leipzig	1 121	1 849	1 : 1,6
Neubrandenburg	420	650	1 : 1,5
Suhl	483	630	1 : 1,3

Anhang 2

Anzahl freier Facharbeiterarbeitsplätze und freigesetzter  
bzw. freiwerdender Facharbeiter

(Stand 31.01.1990)

	Arbeitsplätze für Fachar- beiter	freigesetzte bzw. frei- werdende u. noch zu ver- mittelnde Facharbeiter	Arbeitsplätze je AK
insgesamt	108 900	8 634	12,6
darunter			
Berlin	8 140	2 938	2,8
Cottbus	7 827	221	35,4
Dresden	10 995	546	20,1
K-M-Stadt	10 825	531	20,4
Leipzig	9 864	432	22,8
Magdeburg	7 637	205	37,5
Potsdam	4 791	83	57,7
Rostock	4 819	150	32,1
Schwerin	3 725	127	29,2

Vorschläge für die Umschulung von Hoch- und Fachschulkadern

Beruf	Umschulung möglich zum	Einsatzgebiete
1. Ökonomen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u>Betriebswirt</u>	-Unternehmensführung -Marketing -Finanzwesen -Hauptbuchhalter
2. Ökonomen und Staats- bzw. Gesellschaftswissenschaftler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u>Betriebsorganisator</u>	-Behörden, Ämter usw. -Staatsunternehmen (z.B. Reichsbahn, Post) -Unternehmen -Verbände/Organisationen/Vereinigungen (Tagungsorganisation)
3. Ökonomen und Juristen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u>Wirtschaftsprüfer</u>	-Staatsapparat (Finanzamt) -Geschäftsbanken/Kreditinstitute -Unternehmen/Kontrolle -Versicherungswesen
4. Ökonomen und Juristen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u>Steuerprüfer/ Steuerberater</u>	-Staatsapparat -Unternehmen -Verbände/Vereinigungen -selbständig
5. Ökonomen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u>Anlagenberater/ Kundenberater</u>	-Staatsunternehmen/Staatsbetriebe -Geschäftsbanken/ Kreditinstitute -Unternehmen -selbständig
6. Ökonomen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u>Werbeökonom</u>	-Unternehmen -Verbände/Vereinigungen -Parteien/Organisationen

- |   |  |   |
|---|--|---|
| 7. Ökonomen und AH-Ökonomen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 <u>Außenwirtschaftsberater</u>         | -Unternehmen (Gesamtanalyse des Marktes)<br>-Joint-ventures<br>-selbständig für Partnervermittlung in Ost u. West   |
| 8. Ökonom, Staats- und Rechtswissenschaftler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 <u>Personalmanager/Personalberater</u> | -Unternehmen (Bereich Personalwesen)<br>-Verbände (Vereinigungen)<br>-Ämter für Arbeit (Arbeitsvermittlung)<br>-selbständig   |
| 9. Juristen und Staatswissenschaftler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 <u>Verwaltungsjurist</u>               | -Staatsapparat<br>-Justizwesen<br>-Verbände/Vereinigungen   |
| 10. Staats-, Sozial- und Gesellschaftswissenschaftler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 <u>Sozialarbeiter</u>                  | -Staatsapparat (z.B. Jugend)<br>-Unternehmen (Sozialdirektion)<br>-Infrastruktur der Territorien<br>-Gesundheits- und Sozialwesen (z.B. Rehabilitation)<br>-Strafvollzug<br>-Ämter für Arbeit |
| 11. Sozial- und Gesellschaftswissenschaftler mit Hoch- und Fachschulabschluß          | <u>Sozialtherapeut</u>                 | -Gesundheits- und Sozialwesen (z.B. Beratungsstellen)<br>-Strafvollzug<br>-Jugendarbeit   |
| 12. Fremdsprachenlehrer   | <u>Sprachmittler</u>                   | -für alle Bereiche in Gesellschaft, Verwaltung/ Unternehmen   |
| 13. Lehrer u.a. pädagogische Fachkräfte   | <u>Freizeitpädagoge</u>                | -im kommunalen Bereich<br>-im Schulwesen<br>-in Freizeiteinrichtungen<br>-im Tourismus  |

14. Juristen/  
Staatswissen-  
schaftler mit  
Hoch- und  
Fachschulab-  
schluß

Wirtschaftsjurist

-Unternehmen/Verwaltung  
-Staatsapparat  
-Organisationen

Sekretariat des Ministerrates

Berlin, den 13.2.90

EINLADUNG

Dr. Schmoll

Sie werden gebeten, am Tagesordnungspunkt 9 der Sitzung des  
**Ministerrates**

am 15.2.90 im Hause des Ministerrates, Kloster-  
straße 47, Berlin, 1020, Raum 424, teilzunehmen.

Das beigefügte Sitzungsmaterial ist nach der Beratung im  
Vorzimmer des Sitzungssaales abzugeben.



문서 번호 6

동독 내 "사회" 교과의 새 도입에 관해 - 동독 교육·학술부 지시

1990 년 2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 년 2 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내린 지시로 국가시민교육과목을 사회과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이 도입될 사회과목을 를 담당할 교원은 사회과목을 전공했거나 그와 관련된 연수 등을 통해 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필요로하는 자문을 해 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각 교육위원회는 지역의 교육지도본부(Kabinett) 및 여러 학술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동서독 교원 간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산하 교사교원 계속교육 중앙연구소(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가 사회교과담당 교원들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1989/90 학년도 후반기 사회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별도의 성적평가 없이 수업참가이수증 만을 발급받도록 한다고 지시하였다.

출처: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 10.5 Gesellschaftskunde: Zur Einführung eines neuen Unterrichtsfaches

### *Anweisung des Ministers für Bildung vom 21. Februar 1990*

Auf der Grundlage der Entscheidung des Ministers für Bildung zur Einführung des neuen Unterrichtsfaches "Gesellschaftskunde" wird folgendes angewiesen:

#### § 1

Die Anweisung gilt für das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an all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einschließlich Volkshochschulen und in der Berufsausbildung mit Abitur.

#### § 2

(1) Das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wird mit einer eigenständigen Zielsetzung sowie Inhalts- und Methodenkonzeption an Stelle des bisherigen Unterrichtsfaches "Staatsbürgerkunde" im Rahmen der gültigen Stundentafeln erteilt.

#### § 3

(1) Durch das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wird ein spezifischer und inhaltlich breit gefächelter Beitrag zur Heranbildung von mündigen Bürgern geleistet, die sich durch humanistische Bildung, demokratische Gesinnung und durch die Fähigkeit auszeichnen, in einer rechtsstaatlichen demokratischen Gesellschaft eigenverantwortlich zu handeln.

(2) Die Schüler, Lehrlinge bzw. Lehrgangsteilnehmer werden auf der Grundlage von ausgewählten politischen, ökonomischen, soziologischen, philosophischen, psychologischen, ethisch-moralischen und anderen Kenntnissen befähigt, sich in allen Lebensbereichen kritisch und kulturvoll mit der Wirklichkeit auseinanderzusetzen, den konstruktiven Dialog um die Bewältigung von Widersprüchen zu führen, Konflikte auszutragen und Konsequenzen für das eigene Verhalten und Handeln frei zu bestimmen. Sie üben sich in Toleranz und Achtung gegenüber Menschen mit unterschiedlichen Weltanschauungen, konfessionellen Auffassungen und Bindungen und lernen, unduldsam zu sein gegenüber rassistischen, nationalistischen und faschistischen Positionen und Konzepten. In diesem Sinne leistet das Unterrichtsfach einen Beitrag zur Friedenserziehung.

#### § 4

(1) Der Unterricht im Fach "Gesellschaftskunde" wird von Lehrern erteilt, die dafür erforderliche fachliche und pädagogische Kompetenz besitzen bzw. diese durch die Teilnahme an Qualifizierungsmaßnahmen erwerben, insbesondere von jenen mit einer gesellschaftswissenschaftlichen Ausbildung.

(2) Zur Beratung der Lehrer des Unterrichtsfaches "Gesellschaftskunde" sind in den Territorien durch die zuständigen Schulräte auf der Grundlage von Rechtsvorschriften<sup>1</sup> kompetente Lehrer einzusetzen.

---

<sup>1</sup> Zur Zeit gelten die Anweisungen Nr. 10/88 vom 15. August über das Pädagogische Kreiskabinett (VuM Nr. 7 S. 63) und die Anweisung Nr. 5/84 vom 1. März 1984 über das Bezirkskabinett für Unterricht und Weiterbildung (VuM Nr. 3 S. 41).

## § 5

(1) In den Territorien sichern die Schulräte über die Bezirkskabinette für Unterricht und Weiterbildung sowie die Pädagogischen Kreiskabinette in Zusammenarbeit mit Hoch- und Fachschulen bzw. anderen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durch geeignete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die Vorbereitung der Lehrer auf die neuen Lehrinhalte des Unterrichtsfaches "Gesellschaftskunde". Zur Unterstützung der Arbeit der Lehrer im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sind in den Territorien Erfahrungsaustausche und kollektive Beratungen zu organisieren.

(2) Durch 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 Ludwigsfelde (ZIW) werden zur Unterstützung der Qualifizierungsmaßnahmen in den Territorie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für im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unterrichtende Lehrer zu den neuen Inhalten durchgeführt und den Schulräten inhaltliche Empfehlungen zur Verfügung gestellt.

(3) Über die Teilnahme an Qualifizierungsmaßnahmen während der Unterrichtszeit entscheidet der zuständige Schulrat in Abstimmung mit dem Direktor der Schule des betreffenden Lehrers.

## § 6

(1) Im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werden im 2. Halbjahr des Schuljahres 1989/90 keine Zensuren erteilt.

(2) Auf den Jahres-, Abschluß- und Reifezeugnissen wird auf einer gesonderten Zeile das Unterrichtsfach "Gesellschaftskunde" ausgewiesen. Durch den Eintrag "teilgenommen" ist die Teilnahme am Unterricht zu bestätigen.

## § 7

(1) Die Anweisung tritt am 5. März 1990 in Kraft.

(2) Alle dieser Anweisungen entgegenstehende Regelungen sind nicht mehr anzuwenden.

*Quelle:*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 10.6 Zur Diskussion des Gesellschaftskundeunterrichts

*Vorschläge einer Arbeitsgruppe der Pädagogischen Hochschule "Clara Zetkin" Leipzig vom Februar 1990 [Auszug]*

Zum Stand der Diskussion und zur weiteren Arbeit am Konzept des neuen Faches

[...] In den mehr als 200 Stellungnahmen und konstruktiven Vorschlägen, die uns aus allen Teilen der Republik und aus den verschiedensten Kreisen der Bevölkerung zuzingen, wurde durchweg der radikale Bruch mit dem ehemaligen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gefordert, zu dessen Hauptaufgabe es gehört hatte, den Wahrheits- und Machtanspruch der SED zu begründen. In allen Zuschriften

문서 번호 7

사회 교과: 공교육 11 학년 및 12 학년 학생 관련 권고

1990 년 3 월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학술부가 고등학교 11 학년과 12 학년의 철학수업 관련하여 내린 권고안이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통해 철학수업이 상이한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파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가르침에 편향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하며, 바로 이점에서 철학과목이 이전의 국가시민교육과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철학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자율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데 목표가 있으며, 그를 위해 철학수업의 교과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수 방법의 경우 이전과 달리 교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며, 다양한 형태 수업이 가능하고 특히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출처: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in diesem Fach bestimmen. Besondere Aufmerksamkeit gebührt der dialogischen Kommunikation. Für das Fach Gesellschaftskunde ist der Dialog nicht eine von vielen Methoden, sondern ein die Methodik des Unterrichts im ganzen prägendes Prinzip und konstituierendes Element. Im Dialog lernt der Schüler seine Meinung zu vertreten, genau zuzuhören, sachlich und exakt zu argumentieren. Im Gespräch erhält er Gelegenheit, Toleranz zu üben und andere Tugenden auszubilden, die er als mündiger Staatsbürger braucht, um selber in der Gesellschaft etwas bewirken zu können und sich mit bestimmten Ansichten und Plänen durchzusetzen.

Das Anliegen, einen mündigen Bürger heranzubilden, der gesellschaftliche Zustände und politische Entscheidungen kritisch hinterfragt und aktiv eingreift, entspricht ein Unterricht mit ausgeprägt handlungsorientierten Zügen. Damit gewinnt die Projektmethode einen hohen Stellenwert. Ihr überlegter Einsatz fördert Aktivität und Kooperationsfähigkeit, schafft Bedingungen für die organische Verbindung von praktischer und geistiger Aneignung und lehrt die Schüler, eigene Verantwortung bewußt wahrzunehmen und den eigenen Lernweg zu planen und zu kontrollieren.

Größere Bedeutung gewinnt das forschende Lernen. Quellen- und Dokumentenanalyse, Erkundungsgänge und das Studieren von Fallbeispielen stellen methodisch-organisatorische Formen der Erkenntnisgewinnung dar, die in Kombination mit den anderen methodischen Grundformen den Weg zu solidem, anwendungsbeitem Wissen und Können steuern. Das Lernen in Gesellschaftskunde muß einsichtiges Lernen sein, das sich auf Denken, Verstehen und Problemlösen gründet.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 10.8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Empfehlungen für die Klassen 11 und 12 (1990) [Auszug]*

[...]

1. Der Inhalt des neuen Philosophieunterrichts muß durch Pluralität gekennzeichnet sein und eine einseitige Ausrichtung auf eine philosophische Schule ausschließen.

Der Unterricht soll einen Einblick in die Schatzkammer philosophischen Denkens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gewähren. Dabei wird die Kenntnis von Philosophie nur sehr unvollkommen, exemplarisch zu vermitteln sein - entsprechend den Zielen und eingeschränkten Möglichkeiten der allgemeinbildenden Abiturstufe. In seinen Zielen, in seinem Inhalt und seiner Gliederung darf der Unterricht keinem einzelnen philosophischen System, keiner einzelnen philosophischen Lehre folgen.

Der Rahmenplan greift Fragen auf, die seit jeher Gegenstand des Philosophierens waren - Entwürfe des Menschseins und des Zusammenlebens der Menschen, Probleme ihres Verhältnisses zur Natur. Der Plan hat existentielle Fragen der heutigen Menschheit zum Inhalt und zielt darauf ab, den Jugendlichen zu zeigen, wie über diese Fragen philosophisch nachgedacht wird, wie unterschiedlich dabei Fragestellungen und Antwortversuche sein können, wie von einzelnen philosophischen Richtungen Bausteine gesetzt, Aspekte verfolgt werden, die in die Gesamtheit philosophischer Erkenntnis eingehen. Dabei soll durchaus bewußt werden, daß Philosophen einander widersprechen, daß es einander entgegengesetzte Auffassungen und auch viele offene Fragen gibt. Es soll den Schülern möglichst deutlich werden, daß die Menschheit vor gewaltigen existentiellen Fragen steht, daß sich u.a. Philosophen um ihre Beantwortung, um Lösungen bemühen, daß aber in bezug auf die dringenden existentiellen Fragen der Konsens offensichtlich wächst.

Pluralität unterschiedlicher philosophischer Auffassungen kann im Kurs I z.B. darin zum Ausdruck kommen, daß den Schülern bei der Arbeit zur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der Mensch?" deutlich werden soll, daß verschiedene philosophische Richtungen in dieser Beziehung unterschiedliche Aspekte einbringen bzw. besonders hervorzuheben. Auf dieser Grundlage sind die Schüler zum eigenen Denken herausgefordert, das Selbstreflexion einschließt. Ihr eigenes Denken soll durch Denkangebote der Philosophie bereichert werden.

Im Kurs II "Mensch und Gesellschaft" geht es u.a. um philosophische Probleme, um Denkangebote verschiedener philosophischer Richtungen zum Erkennen der Realität, um Unterschiede und Übereinstimmungen hinsichtlich der Analyse der Situation und möglicher Auswege.

2. Der Philosophieunterricht soll fernab jeglicher Indoktrination sein.

Er soll den Schülern Angebote unterbreiten für das Finden ihres eigenen Lebenssinns. Das steht im Gegensatz zur angestrebten "Erziehungswirksamkeit" der alten Staatsbürgerkunde. Der Unterricht soll Austausch von Ideen stimulieren und organisieren und das weitere eigenständige Suchen anregen - indem er hilft, philosophische Fragen und Antworten, Erkenntnisse, Ideen, Standpunkte zu begreifen, zu erörtern und eigenständig zu beurteilen. Nach Maßgabe seiner realen Möglichkeiten soll der Unterricht das Entstehen von Wertorientierungen der Schüler im Sinne von Humanität, Gerechtigkeit, Solidarität, Toleranz, Frieden, Freiheit, Selbstbestimmung, Verantwortungsbewußtsein fördern und entsprechende Handlungsmotive entfalten helfen.

3. Philosophieunterricht in der Abiturstufe soll kreativitätsfördernd und zugleich leistungsorientiert sein - zu überwinden ist eine kreativitätsmindernde und leistungshemmende dogmatische Enge alten Stils, zu verhindern sind neue Einseitigkeiten.

Der Unterricht soll eigenes schöpferisches Nachdenken, Philosophieren besonders zu Fragen des Menschseins, zu existentiellen Problemen der Menschheit fördern. Er soll aber nicht in unverbindliches, willkürlich-subjektives Diskutieren über Gegenwartsfragen abgleiten. Er soll Angebote philosophischen Denkens aus Vergangenheit und Gegenwart erschließen und nutzen; darf sich aber nicht auf das Archivieren vergangener Gedanken beschränken.



Leistungsanforderungen betreffen besonders:

- das Begreifen philosophischer Probleme und Erkenntnisse, ihren verstehenden Nachvollzug, die Fähigkeit ihrer sprachlichen Reproduktion,
- die Fähigkeit, philosophische Fragen und Aussagen zu erörtern,
- ein elementares Urteilsvermögen, das selbständiges und begründetes Stellungnehmen und Werten einschließt.

4. Der Rahmenplan beruht auf einem neuen Verständnis davon, wie sich zentral Vorgegebenes zu dem durch Lehrer und Schüler eigenständig zu Gestaltenden verhält. Das Dirigistische und Administrative der alten Lehrpläne ist zu überwinden.

Raum für eigene schöpferische Verantwortung bietet zunächst die Möglichkeit der Wahl zwischen den Kursen bzw. deren geeignete Kombination.

Innerhalb der Kurse ergeben sich vielfältige Vertiefungsrichtungen als Integrationsmöglichkeiten, viele Varianten konkreter inhaltlicher Ausgestaltung und methodischer Realisierung. Das Inhalts- und Themenangebot der Kurse bietet Auswahlmöglichkeiten, es soll auf keinen Fall lückenlos abgearbeitet werden. Es soll möglichst durch weitere, durch das Programm nicht vorgegebene Inhalte ergänzt werden, die sich in seinen Rahmen einfügen. Aus den Angeboten und den eigenen Ergänzungen kann der Lehrer gemeinsam mit seinen Schülern den konkreten Kurs für die jeweilige Klasse selbst zusammenstellen. Dabei werden Interessen und Bedürfnisse von Lehrern und Schülern zu beachten sein.

5. Vielseitigkeit im Inhalt und neue Ziele eröffnen neue Möglichkeiten der methodischen Gestaltung und stellen neue Anforderungen an sie.

Im Vordergrund stehen verschiedene Formen der Gespräche von Dialog, Diskurs im Unterricht, philosophische Gespräche. Das Philosophieren im Unterricht ist zugleich Ziel und Mittel: Die Schüler lernen elementares Philosophieren, und gerade dadurch werden ihnen Inhalte philosophischer Schriften besser verständlich. Voraussetzungen dafür sind die gegebenen Erfahrungen und Kenntnisse der Schüler, ihr eigenes Nachdenken über Fragen ihres Lebens und Weltprobleme. Kommunikations- und Argumentationsfähigkeiten werden entwickelt, Standpunkte gefestigt oder in unmittelbare Textgrundlagen gestaltet werden, sie können auch auf dem Studium von Texten, dem Anhören von Lehrervorträgen oder Schülerreferaten beruhen, sie können freie Problemerkörterung sein oder strengere seminaristische Form haben, sie werden meist von Lehrern gelenkt, können aber auch von Schülern geleitet werden, möglich sind Gespräche im Klassenverband oder als Gruppenarbeit, Podiumsdiskussionen einer Gruppe von Schülern, auch mit eingeladenen Teilnehmern, Rollenspiele u.v.a.m.

Philosophieunterricht in der Abiturstufe ist nicht denkbar ohne das Lesen von Texten und die Arbeit am Text. Dabei geht es in erster Linie um philosophische Texte, frühere und gegenwärtigen, wobei Zusammenhänge von Historischem und Heutigem deutlich werden sollen. Es kann sich auch um andere Texte von philosophischer Relevanz handeln, z.B. aus der Belletristik, aus verschiedenen Wissenschaften, aus Religionen. In den Texten Antworten auf bewegende Fragen suchen, sich selbst zu den Texten in Beziehung setzen, von den Texten aus weiterdenken - das sind wesentliche Seiten dieser Tätigkeit. Auch hier geht es um Zusammen-

hänge von Ziel und Mittel. Ein Ziel des Unterrichts besteht in der Fähigkeit, philosophisch relevante Texte elementar zu erschließen. Zugleich ist diese Fähigkeit ein Mittel, zu philosophischen Inhalten vorzudringen.

Wesentlich für den Unterricht sind ferner analytische Methoden der empirischen Sozialforschung in Gestalt von Beobachtung, Befragung usw., durch die Meinungen, Haltungen, Verhaltenstendenzen ermittelt werden. Dabei geht es um Auskünfte über das Denken und Handeln konkreter Menschen und auch um Elemente gesellschaftlicher Aktion, in der die Schüler sich selbst und Bereiche ihrer gesellschaftlichen Umwelt erkunden und verändernd auf sie einwirken. Besonders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ie Arbeit an Projekten (auch an fachübergreifenden) von Interesse sein.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 10.9 Politische Bildung in Brandenburg

*Aus dem Vorläufigen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für die Sekundarstufe I (1991)*

### 1. Ausgangsposition, Ziele und Aufgaben

Die Ereignisse des Jahres 1989 haben zu neuen Chancen für jene politischen Leitideen geführt, die eine humane politische Ordnung möglich machen: Menschenwürde, Freiheit, Pluralismus, Rechtsstaat, parlamentarische Demokratie.

Vor dem Land Brandenburg steht nun die Aufgabe, auf neu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ie ökonomischen, sozialen, ökologisch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Herausforderungen der deutschen Einheit zu meistern.

Eine Demokratie kann nur durch die Aktivität ihrer Bürgerinnen und Bürger wachsen. Deshalb kommt im gegenwärtigen Prozeß gesellschaftlicher Erneu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grundlegende Bedeutung zu. Sie soll das Interesse junger Menschen für Politik fördern und ebenso ihr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am Prozeß der politischen Meinungs- und Willensbildung und der Vertretung und Durchsetzung von Interessen teilzunehmen.

An die Stelle der Erziehung zu vorgegebenen "Wahrheiten" tritt eine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die zur Toleranz, Achtung vor der menschlichen Individualität, Eigenverantwortlichkeit und Kritikfähigkeit herausfordert und ideologische Indoktrination ausschließt. Das erfordert eine grundlegende Neugestaltung der politischen Bildung und Erziehung in einem neuen Unterrichtsfach, das sich in

der Zielsetzung und seinem Inhalts- und Methodenkonzept prinzipiell vom bisherigen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unterscheidet. Der vorliegende Rahmenplan für Politische Bildung stellt sich den Erfordernissen eines demokratischen politischen Unterrichts und ist eindeutig dem kritisch-reflexiven Umgang mit politischen Inhalten gewidmet. Die eigentliche Herausforderung des Faches besteht auch darin, sowohl die Abwendung Jugendlicher von Politik aufzugreifen als auch ihr Engagement bis hin zu den extremen Formen ernst zu nehmen und zum Gegenstand der Auseinandersetzung zu machen. Politische Bildung orientiert sich an den Prinzipien des Grundgesetzes und an den allgemeinen Menschenrechten (Menschenrechtskonvention der UNO); sie knüpft an Ideen der Aufklärung, der Arbeiterbewegung, der Frauenbewegung und anderer emanzipatorischer Bewegungen an. Politische Bildung soll zum Verständnis der erlebten Wirklichkeit beitragen und aufzeigen, wie diese Wirklichkeit gestaltbar und veränderbar ist.

Eine Reihe nationaler und internationaler Entwicklungen und die globale Gefährdung der Welt fordern gegenwärtig neues politisches Denken und Handeln des einzelnen und der Gesellschaft heraus. Zu diesen Entwicklungen gehören:

- die aktuelle politische, gesellschaftlich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die durch vielfältige Verwerfung, Umbrüche und Neuerungen gekennzeichnet ist, alte Feindbilder und Ideologien, die verfallen, und politische Strukturen, die sich auflösen;
- der Einigungsprozeß in Deutschland und Europa, mit dem Nationalitätenkonflikte und Unabhängigkeitsbestrebungen der Nationen Osteuropas, Asiens und anderer Teile der Welt einhergehen;
- das sich verändernde Ost-West-Verhältnis, das zunehmend überlagert wird vom Nord-Süd-Konflikt;
- Prozesse globaler Art, die dazu herausfordern, die Welt zunehmend als ein System zu begreifen, in dem alle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lichen und ökologischen Aspekte vernetzt sind.

Diese Problemlagen und Wandlungsprozesse sind zugleich Ansprüche an politische Bildung, an das, was junge Menschen wissen und lernen müssen, um in der Gegenwart und Zukunft bestehen zu können.

Die Beschäftigung mit der Entwicklung, den Strukturen und der Hinterla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ist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ür das Verständnis aktueller nationaler und internationaler Prozesse. Dabei ist es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m Land Brandenburg besonders wichtig, an jeweilige Erfahrungen anzuknüpfen, die Formen autoritärer Herrschaft aufzuarbeiten und sich mit den überdauernden Prägungen und Verhaltensweisen auseinanderzusetzen.

Politische Bildung soll den Heranwachsenden Orientierungshilfe in der komplexen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sein. Sie orientiert sich in ihrem Ziel und ihren Inhalten an der Personalität des Menschen und versteht dabei Politik als die ständig neu gestellte Aufgabe, menschliches Zusammenleben in Freiheit, Frieden und Gerechtigkeit zu gestalten und zu gewährleisten. An diesem Verständnis soll konkrete Politik gemessen werden. Bei der Gestaltung des Unterrichts sind folgende Grundsätze von Bedeutung:

- Überwältigungsverbot: Es ist nicht erlaubt,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 mit welchen Mitteln auch immer - im Sinne erwünschter Meinungen zu überrumpeln und damit an der Gewinnung eines selbständigen Urteilens zu hindern:



문서 번호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과정계획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운 교과인 사회과목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7학년과 8학년 대상의 교과 내용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환경에 맞추어져 있다면, 9학년과 10학년의 경우는 전지구적인 문제에 초점이 있다.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중의 대화에 있어 학습한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in diesem Fach bestimmen. Besondere Aufmerksamkeit gebührt der dialogischen Kommunikation. Für das Fach Gesellschaftskunde ist der Dialog nicht eine von vielen Methoden, sondern ein die Methodik des Unterrichts im ganzen prägendes Prinzip und konstituierendes Element. Im Dialog lernt der Schüler seine Meinung zu vertreten, argumentierend zuzuhören und zuhörend zu argumentieren. Im Gespräch erhält er Gelegenheit, Toleranz zu üben und andere Tugenden auszubilden, die er als mündiger Staatsbürger braucht, um selber in der Gesellschaft etwas bewirken zu können und sich mit bestimmten Ansichten und Plänen durchzusetzen.

Dem Anliegen, einen mündigen Bürger heranzubilden, der gesellschaftliche Zustände und politische Entscheidungen kritisch hinterfragt und aktiv eingreift, entspricht ein Unterricht mit ausgeprägt handlungsorientierten Zügen. Damit gewinnt die Projektmethode einen hohen Stellenwert. Ihr überlegter Einsatz fördert Aktivität und Kooperationsfähigkeit, schafft Bedingungen für die organische Verbindung von praktischer und geistiger Aneignung und lehrt die Schüler eigene Verantwortung bewußt wahrzunehmen und den eigenen Lebensweg zu planen und zu kontrollieren.

[...]

Quelle: Geschichte und Gesellschaftskunde, Heft 4/1990, Beilage S. 1-3.

## 10.7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Rahmenpläne für die Klassen 7 bis 10 (1990) [Auszug]

[...]

### 1.1 Ziele und Aufgaben

Das Fach Gesellschaftskunde leistet einen Beitrag, die Schüler in ihrer Entwicklung zu selbstbewußten und kritischen Bürgern zu unterstützen, die sich selbständig politische Standpunkte bilden und sich aktiv an gesellschaftlichen Willensbildungs- und Entscheidungsprozessen beteiligen.

Indem der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soziale und politische Erscheinungen analysiert und gesellschaftliche und politische Widersprüche und Konflikte bewußtmacht, weckt er das Interesse der Schüler für Politik, macht er gesellschaftliche Vorgänge durchschaubar, schärft er den Blick für übergreifende politische Zusammenhänge und fördert er die Motivation der Schüler für das engagierte persönliche Eingreifen in gesellschaftliche Prozesse. Diesem Anspruch entsprechend kommt es auf die Herausbildung der Fähigkeit und Bereitschaft der Schüler an,

- die Chancen für die Selbstverwirklichung und für die aktive Einflußnahme auf Gesellschaft und Politik zu erkennen und zu nutzen sowie in sozialer Kooperation persönliche Verantwortung zu tragen;

- den Sinn und Zweck gesellschaftlicher und politischer Strukturen zu erfassen, sie kritisch anzueignen und zur Bewahrung von Freiheit und Menschenwürde beizutragen;
- Konflikte kulturvoll auszutragen, Toleranz und Achtung gegenüber anderen politischen, weltanschaulichen und konfessionellen Auffassungen und Bindungen zu üben und unduldsam zu sein gegenüber allen Äußerungen und Erscheinungsformen von Faschismus und Stalinismus sowie von Glaubens-, Fremden- und Völkerhaß;
- die eigenen Interessen im Zusammenhang mit den Interessen anderer und mit dem Gemeinwohl zu sehen und auf ihre Berechtigung und Durchsetzbarkeit zu prüfen;
- politische und soziale Lösungsvorschläge einzubringen und bei der Beurteilung und beim Mitgestalten von Lösungsvarianten Erfahrungen aus der Vergangenheit zu befragen, sich mit den Medien kritisch auseinanderzusetzen und selbst zur Bildung der öffentlichen Meinung beizutragen.

Dem Ziel des Faches entspricht ein breitgefächertes Inhaltsangebot, das sich in einem Gefüge von obligatorischen Grundkursen und wahlobligatorischen Aufbaukursen widerspiegelt.

Den Gegenstand der Grundkurse in den Klassen 7 und 8 bilden Probleme des gesellschaftlichen Zusammenlebens und der politischen und sozialen Stellung des Bürgers in Staat und Gesellschaft. Die Schüler sollen einen elementaren Einblick in die politische Organisation des gesellschaftlichen Lebens in ihrer Schule, in ihrem Ort, in ihrem Lande und in der Produktion gewinnen, machen sich mit den staatsbürgerlichen Rechten und Pflichten vertraut und begreifen Bedeutung und Sinn von Demokratie und Rechtsstaatlichkeit für das eigene Wohl und das Wohl aller Bürger.

In den Klassen 9 und 10 stehen Fragen der Wirtschaftsordnung und globale Probleme der Existenz und Entwicklung der Menschheit im Mittelpunkt von zwei Grundkursen.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werden dabei die Herausforderungen an das verantwortliche Handeln der Menschen, der Völker und Politiker i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Maßstab herausgearbeitet. In wahlobligatorischen Aufbaukursen erhalten die Schüler Gelegenheit, ihre Fähigkeiten und Einsichten auf bestimmten Gebieten zu erweitern und zu vertiefen.

[...]

## 1.2. Zur didaktisch-methodischen Gestaltung

Die Ziele und Inhalte verlangen ein didaktisch-methodisches Konzept, das durch einen demokratischen, kommunikations- und kooperationsfördernden Führungsstil des Lehrers und durch aktivierende Unterrichtsmethoden geprägt ist.

Methoden im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müssen sich am Ziel der Selbstbestimmung des mündigen Bürgers und an der Erweiterung seines Freiheitsspielraumes in Staat und Gesellschaft auf der Grundlage wachsender Demokratiefähigkeit orientieren. Das impliziert den Vorrang methodischer Verfahren, die selbständiges politisches Urteilen, forschendes Lernen, Kooperationsfähigkeit und kritische Sozialisation fördern. Intensives Lernen und die Anstrengung des Begriffes einerseits und reger geistiger Meinungs- und Gedankenaustausch sowie praktische Aneignungs- und Anwendungstätigkeit andererseits müssen die Qualität des Unterrichts



in diesem Fach bestimmen. Besondere Aufmerksamkeit gebührt der dialogischen Kommunikation. Für das Fach Gesellschaftskunde ist der Dialog nicht eine von vielen Methoden, sondern ein die Methodik des Unterrichts im ganzen prägendes Prinzip und konstituierendes Element. Im Dialog lernt der Schüler seine Meinung zu vertreten, genau zuzuhören, sachlich und exakt zu argumentieren. Im Gespräch erhält er Gelegenheit, Toleranz zu üben und andere Tugenden auszubilden, die er als mündiger Staatsbürger braucht, um selber in der Gesellschaft etwas bewirken zu können und sich mit bestimmten Ansichten und Plänen durchzusetzen.

Das Anliegen, einen mündigen Bürger heranzubilden, der gesellschaftliche Zustände und politische Entscheidungen kritisch hinterfragt und aktiv eingreift, entspricht ein Unterricht mit ausgeprägt handlungsorientierten Zügen. Damit gewinnt die Projektmethode einen hohen Stellenwert. Ihr überlegter Einsatz fördert Aktivität und Kooperationsfähigkeit, schafft Bedingungen für die organische Verbindung von praktischer und geistiger Aneignung und lehrt die Schüler, eigene Verantwortung bewußt wahrzunehmen und den eigenen Lernweg zu planen und zu kontrollieren.

Größere Bedeutung gewinnt das forschende Lernen. Quellen- und Dokumentenanalyse, Erkundungsgänge und das Studieren von Fallbeispielen stellen methodisch-organisatorische Formen der Erkenntnisgewinnung dar, die in Kombination mit den anderen methodischen Grundformen den Weg zu solidem, anwendungsbeitem Wissen und Können steuern. Das Lernen in Gesellschaftskunde muß einsichtiges Lernen sein, das sich auf Denken, Verstehen und Problemlösen gründet.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 10.8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Empfehlungen für die Klassen 11 und 12 (1990) [Auszug]*

[...]

1. Der Inhalt des neuen Philosophieunterrichts muß durch Pluralität gekennzeichnet sein und eine einseitige Ausrichtung auf eine philosophische Schule ausschließen.

Der Unterricht soll einen Einblick in die Schatzkammer philosophischen Denkens in Vergangenheit und Gegenwart gewähren. Dabei wird die Kenntnis von Philosophie nur sehr unvollkommen, exemplarisch zu vermitteln sein - entsprechend den Zielen und eingeschränkten Möglichkeiten der allgemeinbildenden Abiturstufe. In seinen Zielen, in seinem Inhalt und seiner Gliederung darf der Unterricht keinem einzelnen philosophischen System, keiner einzelnen philosophischen Lehre folgen.



문서 번호 9

중앙원탁회의 내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1990년 3월 5일

담당자 / 기관: 중앙원탁회의,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 한스 모드로우 수상

내용:

이 문서는 중앙원탁회의에 설치된 교육·육아·청소년 부문 실무단이 원탁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사안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와 의회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정당 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 국가 예산에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예산을 반영
- 아동 청소년 단체를 위한 자원과 시설 그리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마련

출처: Thaysen, Uwe (Hrsg.): Der zentrale Runde Tisch der DDR. Wortprotokolle und Dokumente. Wiesbaden, 2000: Westdeutscher Verlag.



Runder Tisch  
15. Sitzung  
05. März 1990

Vorlage 15/ 9

Im Ergebnis der Tätigkeit des "Runden Tisches der Jugend", der notwendig gewordenen symbolischen Besetzung des Hauses der Jugend (ehemals Zentralrat der FDJ) und der auf der Grundlage eines Briefes des "Runden Tisches der Jugend" an den Ministerpräsidenten Hans Modrow getroffenen Festlegung der Einberufung einer Kommission unter Leitung des Amtes für Jugend und Sport zur Sicherung und Kontrolle der Objekte zur Nutzung durch Kinder und Jugendliche möge der "Runde Tisch" beschließen:

1. Die Regierung, das Parlament und alle sich zur Wahl stellenden Parteien und Bewegungen bekennen sich zur Wahrung aller grundlegenden Rechte der Kinder und Jugendlichen.
2. Die mit der Wahl am 18. 03. 1990 legitimierte Regierung unseres Landes sichert die Bereitstellung von finanziellen Mitteln aus dem Staatshaushalt für die Tätigkeit der Kinder- und Jugendverbände und -bewegungen.
3. Die mit der Wahl am 18. 03. 1990 legitimierte Regierung unseres Landes akzeptiert und unterstützt die eingesetzte Kommission im Amt für Jugend und Sport zur Sicherung der Mittel, Objekte und Werte (die vormals der FDJ zur Verwaltung übergeben wurden) für die Jugendverbände und -bewegungen.
4. Die mit der Wahl am 18. 03. 1990 legitimierte Regierung unseres Landes schafft Voraussetzungen zur Sicherung aller Objekte, die den Kindern der Nutzung übergeben wurden (z. B. Freizeit und Erholung).

AG Bildung - Erziehung - Jugend



문서 번호 1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0 년 [발췌]

1990 년 4 월

담당자 / 기관: 연방교육·학술부 장관 위르겐 W. 밀레만;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가 1990 년에 발간한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에서 동서독 간의 교류에 관해 설명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6 년 동독과의 문화협정이 체결 된 이후 직업 교육 부문에 있어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9 년 11 월 동독에서 급격한 변혁이 시작된 이후 동서독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이 변화되었고, 협력이 확대되었다. 1990 년 1 월에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동독 교육부는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여, 공동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앞으로 구성될 기구의 과제와 구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협력의 목표는 동독의 개혁과정이 계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동서독은 이미 1987 년 이후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현재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왔다. 이 회의를 위해 동독의 대표들이 서독 연방교육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미 직업교육과 관련한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었다.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0.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6.  
Berufsbildungsbericht 1990. Bad Honnef: K.H. Bock Verlag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6

# **Berufsbildungsbericht 1990**

Bonn 1990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10. Zusammenarbeit mit der DDR

Seit Abschluß des Kulturabkommens mit der DDR im Mai 1986 sind die Kontakte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stetig ausgebaut worden. Die seit November 1989 eingetretenen deutschlandpolitischen Entwicklungen haben die Bedingungen der Zusammenarbeit beider deutscher Staaten jedoch entscheidend verändert und die Möglichkeiten dazu erheblich erweiter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er Minister für Bildung und Jugend der DDR haben im Januar 1990 vereinbart, eine gemeinsame Arbeitsgruppe einzurichten, die u. a. die Frage prüfen soll, ob es auf einer gemeinsamen Bildungskommission bedarf und welche Aufgaben und Strukturen eine solche Kommission haben sollte.

Die berufliche Bildung soll ein Schwerpunkt der weiteren Zusammenarbeit sein, die wesentlich intensiviert werden soll und vor allem darauf zielt, den Modernisierungs- und Reformprozeß in der DDR zu unterstützen.

Bereits seit 1987 nimmt die DDR am Austauschprogramm für Fachkräfte der beruflichen Bildung teil, das die Carl-Duisberg-Gesellschaft nach Richtlinien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führt (vgl. **Kapitel 9.4**). 1988 besuchte eine Gruppe von Fachleuten aus der DD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 Austausch von Auszubildenden ist bereits 1983 als Pilotprojekt initiiert worden. In diesem Vorhaben konnten bisher jährlich — so auch 1989 — 30 Gruppen von je 16 bis 20 Auszubildenden in die DDR reisen und sich über das berufliche Bildungswesen in der DDR informieren. Organisatorisch wird das Programm im Rahmen des innerdeutschen Jugendaustausches abgewickelt. Die DDR hat ihrerseits bisher noch keine entsprechenden Gruppen in die Bundesrepublik entsandt.

Im Frühjahr 1989 besuchte eine Gruppe von Fachleuten aus dem Staatssekretariat für Berufsbildung und aus den Bezirk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eine Woch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e informierten sich über die berufliche Bildung und aktuelle Probleme in der Berufsbildungspolitik. Es wurden Gespräche i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it Vertretern des Kuratoriums der Deutschen Wirtschaft für Berufsbildung und der Spitzenorganisationen der Deutschen Wirtschaft sowie mit dem Bundesvorstand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geführt. Die Gruppe konnte sich über die schulische Berufsausbildung beim Besuch einer Berufsschule in Düsseldorf, über di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sbesondere über die Umsetzung der neugeordneten Metall- und Elektroberufe, beim Besuch des Mercedes-Benz-Werkes in Gaggenau informieren. Daneben fanden i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Gespräche auf Fachebene über die zukünftige Zusammenarbeit in der beruflichen Bildung statt.

Seit 1987 führt auch der Bundesminister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einen Praktikantenaustausch mit der DDR durch. Dabei werden jeweils fünf Fachkräfte der Landwirtschaft und des Gartenbaus für eine Dauer von vier Monaten ausgetauscht. Voraussetzung für die Teilnahme an diesem Austauschprogramm, das organisatorisch vom Deutschen Bauernverband betreut wird, ist eine abgeschlossene Ausbildung in den Berufen Landwirt oder Gärtner. Alle Austauschprogramme sollen fortgesetzt werden.

문서 번호 11

사업체에 소속된 유치원 및 종합기술교육학교, 직업학교의 유지에 관한 명령

1990 년 6 월 6 일

담당자 / 기관: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로타 드메지에르가 이끄는 동독의 개혁정부가 발표한 직장내 교육기관과 탁아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조치이다. 드메지에르 정부는 1990 년 3 월 18 일 자유총선거를 통해 입각한 이후 개혁을 위해 수 많은 법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이 명령도 직업교육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조치 중의 하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들은 탁아시설 및 7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학생들의 종합기술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교육과 관련해 합의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사업체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법적으로 그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유관계의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체가 자신의 의무와 유치원, 직업교육기관 등의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그 의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체에서 부담한다. 사업체들은 교육시설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적 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직업교육 중인 견습생은 직업교육을 주관하는 사업장이 다른 법인에 흡수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도 직업교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해체될 경우 기업은 견습생이 다른 사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한다.

이 명령에는 사업체가 보유한 부동산과 다른 시설 설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32 - Ausgabetag: 19. Juni 1990



- die Aufsicht über die schulfachlichen Angelegenheiten,
- die Aufsicht über die Rechts- und Verwaltungsangelegenheiten, soweit sie nicht in die Kompetenz anderer Aufsichtsbehörden fallen,
- die Aufsicht über die ihnen unterstellten Leiter und Pädagogen in allen dienstlichen Angelegenheiten.

(3) Die schulaufsichtliche Tätigkeit ist so durchzuführen, daß die Verantwortung der Einrichtungen und Pädagogen für Unterricht und Erziehung gefördert wird. Die Schulaufsicht schließt die Beratung der der Schulaufsichtsbehörde unterstellten Leiter und Pädagogen ein.

(4) Gemäß der Kommunalverfassung vom 17. Mai 1990 (GBl. I Nr. 28 S. 255) haben die Schulaufsichtsbehörden das Informations-, Beanstandungs-, Aufhebungs- und Anordnungsrecht sowie das Recht zur Ersatzvornahme.

(5) Die Aufsicht über 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wird durch gesonderte rechtliche Regelungen bestimmt.

#### § 4

Zum Leiter einer Schulaufsichtsbehörde kann berufen werden, wer über die dafür erforderliche Eignung, Befähigung und fachliche Leistung verfügt. Dazu gehören insbesondere das persönliche Bekenntnis zu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sozialen und rechtsstaatlichen Ordnung sowie die erforderliche pädagogische Qualifikation und umfangreiche Berufserfahrungen als Pädagoge oder Wissenschaftler im Bildungswesen.

#### § 5

(1) Der Leiter des Landesschulamtes (Landesschulrat) wird vom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n Abstimmung mit den Regierungsbevollmächtigten der Bezirke für das künftige Land berufen.

(2) Der Leiter des Schulamtes eines Kreises (Kreisschulrat) wird auf Vorschlag des Landesschulrates, der sich mit dem Oberbürgermeister bzw. Landrat des Kreises abstimmt, vom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erufen.

(3) Die Landesschulämter üben die Aufsicht über die Schulämter der Kreise aus.

#### § 6

(1) Die Leiter der Schulämter können Stellvertreter für die einzelnen Bildungsbereiche nach Maßgabe der territorialen Erfordernisse einsetzen.

(2) Die Stellvertreter müssen über die erforderliche Eignung, Befähigung und fachliche Leistung verfügen und insbesondere die Qualifikation für den jeweiligen Bildungsbereich besitzen und sich zu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sozialen und rechtsstaatlichen Ordnung bekennen.

#### § 7

(1) Diese Verordnung tritt am Tag nach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Die zur Durchführung dieser Verordnung erforderlichen Bestimmungen werden durch den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rlassen.

(3) Diese Verordnung gilt bis zum Inkrafttreten anderer rechtlicher Regelungen einschließlich landesrechtlicher Regelungen.

Berlin, den 30. Mai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Prof. Dr. Hans Joachim Mey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Verordnung über die Aufrechterhaltung von Leistungen betrieblicher Kindergärten, polytechnischer und berufsbildender Einrichtungen

vom 6. Juni 1990

### § 1

#### Geltungsbereich

(1) Diese Verordnung gilt für

- Unternehmen,
- Kombinate, Betriebe, Genossenschaften und Einrichtungen (nachfolgend Betriebe genannt),
- Kommunalorgane,
- Handwerkskammer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2) Für die in dieser Verordnung geregelten Fälle sind entgegenstehende Regelungen der Anordnung vom 15. April 1986 über die Kooperation der Betriebe auf dem Gebiet der Berufsbildung und die Entwicklung des Netzes der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GBl. I Nr. 18 S. 276) nicht anzuwenden.

### § 2

#### Durchsetzung vertraglich vereinbarter Leistungen zur Kinderbetreuung, zur polytechnischen und beruflichen Ausbildung

(1) Von Betrieben in Kommunalverträgen, Kooperationsvereinbarungen und Lehrverträgen vereinbarte Leistungen zur Kinderbetreuung, zur polytechnischen Ausbildung von Schülern der Klassen 7 bis 12 und beruflichen Ausbildung von Lehrlingen, einschließlich Berufsausbildung mit Abitur, sind zu erfüllen. Diese vertraglichen Vereinbarungen dürfen nicht einseitig gelöst werden.

(2) Beim Übergang der Betriebe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ist durch definitive Festlegung der Rechtsnachfolge zu gewährleisten, daß die Verpflichtungen der Betriebe gemäß Absatz 1 und die dazu erforderlichen Kapazitäten (betriebliche Kindergärten, betriebliche polytechnische Einrichtungen, betriebliche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übernommen oder weitergeführt werden.

(3) Betriebe, die Verpflichtungen aus vertraglichen Vereinbarungen gemäß Absatz 1 nicht erfüllen, sind zur Erstattung der Kosten an diejenigen Betriebe oder andere Rechtsträger verpflichtet, die diese Leistungen übernehmen. Die Koordination erfolgt durch die Kommunalorgane.

### § 3

#### Übernahme von betrieblich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der polytechnischen und beruflichen Ausbildung in Kapitalgesellschaften, in kommunale bzw. andere Rechtsträgerschaft

(1) Werden bei der Bild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von Betrieben als Gesellschafter Aufgaben und Kapazitäten zur Kinderbetreuung, zur polytechnischen Ausbildung von Schülern und zur beruflichen Ausbildung von Lehrlingen eingebracht, sind sie im Gesellschaftsvertrag aufzunehmen. Die von den Kapitalgesellschaften diesbezüglich übernommenen und vertraglich vereinbarten Aufgaben werden gemäß § 5 Abs. 2, 3, 4 und 5 dieser Verordnung finanziert.

(2) Werden bei Bildung von Kapitalgesellschaften Aufgaben und Kapazitäten zur Kinderbetreuung und polytechnischen Ausbildung der Schüler nicht übernommen, sind sie bei Zustimmung der kommunalen Organe in kommunale Rechtsträgerschaft zu übernehmen.

(3) Die Aufgabenbereiche theoretische Berufsausbildung der betrieblichen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Betriebsberufsschulen, Betriebsschulen), die überwiegend im Rahmen der territorialen Koordinierung Aufgaben zur theoretischen

beruflichen Ausbildung für Lehrlinge anderer Betriebe bzw. Unternehmen durchführen, sind im Zusammenhang mit der Umwandlung von Betrieben in Kapitalgesellschaften in kommunale Rechtsträgerschaft zu übernehmen. Die Zustimmung dazu erteilen bis zur Bildung der Länder die Kommunalorgane.

(4) Berufsschulgebäude für den theoretischen Unterricht, einschließlich der Lehrlingswohnheimgebäude, betriebliche polytechnische Einrichtungen sowie betriebliche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einschließlich ihrer Ausrüstung und Ausstattung, werden entsprechend den Rechtsvorschriften unentgeltlich in die kommunale Rechtsträgerschaft übernommen.

(5) Lehrwerkstätten und andere Objekte von Betrieben, die der praktischen beruflichen Ausbildung der Lehrlinge, der polytechnischen Ausbildung der Schüler oder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dienen und die bei stark zergliederter betrieblicher Auflösung aufgrund ihrer Größenordnung nicht in Kapitalgesellschaften übernommen werden, sind von den bisherigen Trägerbetrieben zur Nutzung als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anzubieten. Bis zur Länderbildung haben die kreislichen Verwaltungsorgane im Zusammenwirken mit den Handwerkskammern und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zu prüfen und zu entscheiden, ob diese Ausbildungskapazitäten als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in die Trägerschaft von Kammern und Verbänden übernommen werden.

(6) Bei der Übernahme vo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der polytechnischen Ausbildung der Schüler und der beruflichen Ausbildung der Lehrlinge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sind den in diesen Einrichtungen Tätigen durch den bisherigen Beschäftigungsbetrieb im Zusammenwirken mit dem neuen Rechtsträger Überleitungsverträge anzubieten.

#### § 4

##### **Sicherung von betrieblich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und der polytechnischen und beruflichen Ausbildung bei Betriebsauflösungen**

(1) Bei Auflösung von bzw. sich in Liquidation befindlichen Betrieben ist durch die Kommunalorgane daran mitzuwirken, die in diesen Betrieben vorhandenen Kapazitäten der Kinderbetreuung, der polytechnischen Ausbildung der Schüler oder der beruflichen Ausbildung der Lehrlinge in Übereinstimmung mit dem Bedarf an Kindergarten- und Ausbildungsplätzen sowie a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leistungen in eine andere Rechtsträgerschaft neu einzuordnen.

(2) Können Lehrlinge aufgrund der Schließung bzw. des sich in Liquidation befindlichen Lehrvertragsabschließenden Betriebes ihre Berufsausbildung nicht beenden, ist durch diesen Betrieb mit Unterstützung der Kommunalorgane das Lehrverhältnis in einen anderen Betrieb überzuleiten.

#### § 5

##### **Finanzierung von betrieblichen Kindergärten, polytechnischen und berufsbildenden Einrichtungen**

(1) Leistungen der Unternehmen und Betriebe zur Kinderbetreuung, polytechnischen Ausbildung von Schülern und beruflichen Ausbildung von Lehrlingen sind gemeinnütziges Anliegen der Gesellschaft und werden als besonders förderungswürdig anerkannt.

(2) Von Unternehmen und Betrieben erbrachte Leistungen der Kinderbetreuung werden auf der Grundlage der gelten-

den Rechtsvorschriften durch öffentliche Zuwendungen gefördert. Den Unternehmen und Betrieben werden für darüber hinaus entstehende Kosten auf Antrag Steuervergünstigungen gewährt.

(3) Den Unternehmen und Betrieben werden für erbrachte Leistungen zur polytechnischen Ausbildung auf Antrag Steuervergünstigungen gewährt.

(4) Die Finanzierung der polytechnischen Ausbildung in kommunalen Einrichtungen erfolgt aus Mitteln des Haushaltes.

(5) Die Unternehmen und Betriebe erhalten für erbrachte Leistungen der theoretischen Berufsausbildung (Betriebsberufsschulen, Betriebsschulen und betriebliche Lehrlingswohnheime) nach den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Zuwendungen aus dem Haushalt.

(6) Die Schaffung überbetrieblicher Ausbildungsstätten bei Handwerks-,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kann durch die Gewährung von öffentlichen Zuwendungen unterstützt werden.

#### § 6

##### **Ordnungsstrafbestimmungen**

(1) W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als Leiter oder leitender Mitarbeiter von Unternehmen oder Betrieben den Festlegungen gemäß § 2, § 3 Abs. 1 und 6, § 4 Abs. 2 zuwiderhandelt, kann mit Verweis oder Ordnungsstrafe von 10 DM bis 500 DM belegt werden.

(2) Eine Ordnungsstrafe bis zu 1 000 DM kann ausgesprochen werden, wenn bei einer vorsätzlichen Ordnungswidrigkeit gemäß Absatz 1 die gesellschaftlichen Interessen grob mißachtet wurden oder sie aus Vorteilsstreben oder wiederholt innerhalb von 2 Jahren begangen und mit Ordnungsstrafe geahndet wurde.

(3)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obliegt dem zuständigen Landrat oder Oberbürgermeister.

(4) Für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und den Ausspruch von Ordnungsstrafmaßnahmen gilt das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G — (GBl. I Nr. 3 S. 101).

#### § 7

##### **Schlußbestimmungen**

(1) Diese Verordnung tritt am Tag nach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ieser Verordnung erlassen d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er Minister der Finanzen.

Berlin, den 6. Juni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Prof. Dr. Hans Joachim Mey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문서 번호 12

서독의 수공업분야규정(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 년 7 월 12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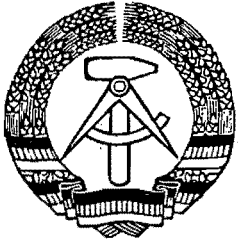
이 문서는 1990 년 7 월 1 일 동서독 간의 화폐통합 조약이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에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서독의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지역에 주단위의 담당 관청이 설립될 때까지는 동독의 구역행정기관이 동독 지역에서 이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독 수공업령이 동독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부분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서독 연방정부 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동독에 다른 유사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 외에, 기존의 수공업 사업체 운영 자격 및 마이스터 자격증 사용, 그리고 견습생의 직업 교육 및 그와 유사한 다른 권리는 보호받으며, 기존의 견습관계는 견습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44 - Ausgabetag: 27. Juli 1990







# GESETZBLATT

##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707

1990

Berlin, den 27. Juli 1990

Teil I Nr. 44

Tag	Inhalt	Seite
12. 7. 90	<b>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Gesetzes zur Ordnung des Handwerks (Handwerk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b>	707
12. 7. 90	<b>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Gesetzes über das Schornsteinfegerwesen (Schornsteinfeger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b>	709
13. 7. 90	<b>Gesetz über die Berufsvertretungen und die Berufsausübung der Ärzte, Zahnärzte, Tierärzte und Apotheker – Kammergesetz –</b>	711
6. 7. 90	<b>Gesetz über die Änderung des Gesetzes vom 21. Juni 1990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b>	713
13. 7. 90	<b>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eine weitere Regelung zur Zahlung von staatlichem Kindergeld</b>	713
11. 7. 90	<b>Verordnung zur Anwendung von Rechtsvorschriften</b>	713
11. 7. 90	<b>Verordnung zu Übergangsregelungen bis zur erstmaligen Wahl der Betriebsräte nach dem Betriebsverfassungsgesetz</b>	715
4. 7. 90	<b>Verordnung über Arzneimittelpreise – Arzneimittelpreis-Verordnung –</b>	715
11. 7. 90	<b>Verordnung über die Anmeldung vermögensrechtlicher Ansprüche</b>	718
11. 7. 90	<b>Verordnung zur Regelung der Preisangaben – Preisangabenverordnung –</b>	719
20. 6. 90	<b>Anordnung über die Genehmigung von zivilen Flugplätzen</b>	721
7. 6. 90	<b>Anordnung über die Gewerbeanzeigen, über Gewerbeerlaubnisse und Reisegewerbekarten sowie über die Gebühren der Gewerbeämter</b>	726

### Gesetz

####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Gesetzes zur Ordnung des Handwerks (Handwerk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2. Juli 1990**

##### § 1

(1) Das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 (Handwerks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8. Dezember 1965 (BGBl. I 1966 S. 1), zuletzt geändert durch die Verordnung vom 19. März 1989 (BGBl. I S. 551), wird nach Maßgabe d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Übergangsvorschri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gesetzt.

(2) Zum Zeitpunkt der Inkraftsetzung des Gesetzes gemäß Absatz 1 treten auch die zu seiner Durchfüh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mit Ausnahme der Rechtsverordnungen nach § 27a und § 40 der Handwerksordnung, als solche in Kraft.

(3) Das Gesetz gemäß Absatz 1 und die zu seiner Durchführung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gemäß Absatz 2 werden im Sonderdruck Nr. 1442 des Gesetzblattes veröffentlicht.

(4) Die Ausbildungsordnungen werden durch den Minister für Wirtschaft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veröffentlicht.

##### § 2

(1) Rechtsverordnungen,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er Grundlage der Handwerksordnung nach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rlassen werden, werden zur Gewährleistung der Rechtsgleichhei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durch den Ministerrat bzw. die zuständigen Minist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aft gesetzt.

(2) Die Rechtsverordnungen nach § 27a und § 40 der Handwerksordnung bedürfen der gesonderten Inkraftsetzung durch die zuständigen Minist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3) Die Handwerkskammern werden ermächtigt, befristete Ausnahmen von den nach § 25 der Handwerksordnung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zuzulassen.

##### § 3

(1) Die Aufgaben der Obersten Bundesbehörden werden von den entsprechenden Obersten Behörd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ahrgenommen.

(2) Bis zur Bildung entsprechender Landesbehörd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rden die Aufgaben der Obersten Landesbehörden, die Aufgaben der höheren Verwaltungsbehörden und die Aufgaben der nach Landesrecht zuständigen Behörd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den Bezirksverwaltungsbehörden wahrgenommen.

(3) Vorschriften zur Beteiligung oder Zuständigkeit des Bundesausschusses für Berufsbildung finden keine Anwendung.

(4) Die Erhebung von Ordnungsgeld durch die Handwerkskammern wird bis zur rechtlichen Regelung der Ordnungsstrafbefugnis der Handwerkskammern ausgesetzt.

#### § 4

(1) Die §§ 117 Abs. 1 und 118 Abs. 1 werden als Ordnungsstrafbestimmungen übernommen.

(2) Der § 117 Abs. 2 erhält folgende Fassung: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m Verweis oder einer Ordnungsstrafe bis zu 10 000 DM belegt werden.“

(3) Der § 118 Abs. 2 erhält folgende Fassung:

„Die Ordnungswidrigkeiten nach Absatz 1 Nr. 1, 2 und 6 können mit einem Verweis oder einer Ordnungsstrafe bis zu 2 000 DM, die Ordnungswidrigkeiten nach Absatz 1 Nr. 3 bis 5 können mit einem Verweis oder einer Ordnungsstrafe bis zu 10 000 DM belegt werden.“

(4) Als § 118a wird eingefügt und erhält folgende Fassung:

#### „§ 118a

(1)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nach § 117 und § 118 obliegt dem Leiter der zuständigen Gewerbebehörde.

(2) Für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und den Ausspruch von Ordnungsstrafmaßnahmen gilt das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G — (GBl. I Nr. 3 S. 101).“

#### § 5

Soweit die Handwerksordnung sowie die Rechtsverordnungen gemäß § 1 auf andere Rechtsvorschriften verweisen und in diesem Gesetz keine Regelung vorgesehen ist, ist durch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Einvernehmen mit den zuständigen Behörd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festzulegen, welche vergleichbar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zuwenden sind.

#### § 6

(1) Eine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stehende Berechtigung

1. ein Handwerk oder ein handwerksähnliches Gewerbe als stehendes Gewerbe selbständig zu betreiben,
2. zum Einstellen oder zur Ausbildung von Lehrlingen in Handwerksberufen oder
3. zur Führung des Meistertitels

bleibt bestehen.

(2) Einkaufs- und Liefergenossenschaften und Arbeitsgemeinschaften der Produktionsgenossenschaften des Handwerks bleiben Mitglied der Handwerkskammer.

(3) Gewerbetreibende, die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rechtigt sind, ein Handwerk als stehendes Gewerbe selbständig zu betreiben, werden auf Antrag oder von Amts wegen mit dem Handwerk der Anlage A der Handwerksordnung in die Handwerksrolle eingetragen, das dem bisherigen Handwerk zugeordnet werden kann. Führen solche Gewerbetreibende rechtmäßig den Titel „Meister des Handwerks“, sind sie berechtigt, den Meistertitel des neuen Handwerks zu tragen.

(4) Gewerbetreibende, die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in handwerksähnliches Gewerbe betreiben, das in der Anlage A der Handwerksordnung als Handwerk aufgeführt ist, werden auf Antrag oder von Amts wegen mit diesem Handwerk in die Handwerksrolle eingetragen.

(5) Absatz 3 Satz 1 findet auf Gewerbetreibende, die ein handwerksähnliches Gewerbe betreiben, entsprechende Anwendung.

(6) In der Anlage B ist der unter III. Gruppe der Holzgewerbe laufende Nr. 15 verzeichnete Beruf Holz-Leitermacher zu streichen und in der Anlage A III. Gruppe der Holzgewerbe als laufende Nr. 64a Holzleitermacher entsprechend zu ergänzen.

(7) In der Anlage A VI. Gruppe der Gewerbe für Gesundheits- und Körperpflege sowie der chemischen und Reinigungsgewerbe wird unter der laufenden Nr. 95a der Beruf Kosmetiker eingetragen. In der Anlage A VII. Gruppe der Glas-, Papier- und keramischen und sonstigen Gewerbe wird unter der laufenden Nr. 126 der Beruf Schädlingsbekämpfer eingetragen.

(8) Der § 7 Abs. 7 ist ersatzlos zu streichen.

#### § 7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stehende Lehrverhältnisse werden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es sei denn, die Parteien des Lehrvertrages vereinbaren die Fortsetzung der Berufsausbildung in einem Handwerk der Anlage A der Handwerksordnung.

#### § 8

(1) Die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stehenden handwerklichen Organisation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ind den Bestimmungen der Handwerksordnung entsprechend bis 31. Dezember 1991 umzubilden; bis dahin gelten sie als Organisationen im Sinne der Handwerksordnung. Dasselbe gilt für die bestehenden Facharbeiter- und Meisterprüfungskommissionen; bis dahin gelten sie als Prüfungsausschüsse im Sinne der Handwerksordnung.

(2) Die Handwerkskammern haben unverzüglich mit der Schaff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Beteiligung der Gesellen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der Handwerksordnung zu beginnen und spätestens bis zum 31. Dezember 1991 abzuschließen.

#### § 9

Die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laufenden Prüfungsverfahren werden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 § 10

(1) Dieses Gesetz tritt mit sein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Gleichzeitig treten außer Kraft:

- Gesetz vom 9. August 1950 zur Förderung des Handwerks (GBl. Nr. 91 S. 827) in der Fassung des Ergänzungsgesetzes vom 12. März 1958 (GBl. I Nr. 20 S. 261),
-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vom 27. Juni 1951 zum Gesetz zur Förderung des Handwerks (GBl. Nr. 80 S. 649),
-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vom 25. Oktober 1956 zur Verordnung über die Regelung der vertraglichen Verpflichtungen der privaten Industriebetriebe als Lieferer (GBl. I Nr. 106 S. 1305),
- Anordnung Nr. 1 vom 30. Dezember 1974 über die Ausbildung der Meister des Handwerks (GBl. I 1975 Nr. 9 S. 173) i. d. F. der Anordnung Nr. 2 vom 20. Juli 1979 (GBl. I Nr. 29 S. 273) und der Anordnung Nr. 3 vom 29. September 1987 (GBl. I Nr. 28 S. 275),
-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vom 1. Dezember 1980 zur Verordnung über das Statut der Handwerkskammern der Bezirke (GBl. I 1981 Nr. 3 S. 33),
- Gesetz vom 11. Januar 1990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s Handwerks (GBl. I Nr. 3 S. 7),
- Verordnung vom 22. Februar 1990 über die Organisation des Handwerks (GBl. I Nr. 17 S. 150).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zwölften Jul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zwölften Jul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문서 번호 13

직업학교법 (동독)

1990 년 7 월 19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

이 법은 화폐통합 이후 동독최고인민회의가 도입한 법으로 각 연방주가 학교법을 제정할 때까지 직업학교의 업무와 설치 그리고 재정을 규정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는 공립학교이다. 직업학교의 운영주체는 시외 행정구역들 및 각 시이다. 직업교육 수업은 독일연방의 독일주문화교육장관협의회가 정한 통상의 교과과정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문직종의 직업교육의 경우 직업교육서류 및 시험규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별도의 학교졸업시험은 실시되지 않는다. 1990 년 9 월 1 일부로 운영주체는 직업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체 직업학교 및 지역 직업학교는 1990 년 8 월 31 일부로 해소된다. 그 물자 설비는 새로 설립된 직업학교로 이전된다. 국가는 사업체 운영 및 직업학교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그를 감독한다. 직업학교의 수업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 § 96

**Eignung der Ausbildungsstätte**

(1) Eine Ausbildungsstätte ist nach Art und Einrichtung im Sinne des § 22 Abs. 1 Nr. 1 für die Berufsausbildung nur geeignet, wenn sie von der nach Landesrecht zuständigen Behörde nach Anhören der zuständigen Stelle als Ausbildungsstätte anerkannt ist.

(2)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kann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zur Förderung der Berufsbildung nach Anhören des Bundesausschusses für Berufsbildung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Mindestanforderungen für die Größe, die Einrichtung und den Bewirtschaftungszustand der Ausbildungsstätte festsetzen.

## Neunter Abschnitt

**Sonstige Berufs- und Wirtschaftszweige**

## § 97

**Ermächtigung**

Der zuständige Fachminister kann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für Fälle, die in den §§ 74 bis 96 nicht geregelt sind, die zuständige Stelle bestimmen und Vorschriften über die für die fachliche Eignung erforderlichen beruflichen Fertigkeiten und Kenntnisse sowie die Eignung der Ausbildungsstätte erlassen.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kann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für die Fälle des Satzes 1 Vorschriften über die berufs- und arbeitspädagogischen Kenntnisse erlassen. Der Bundesausschuß für Berufsbildung ist vorher zu hören.

## Siebenter Teil

**Bußgeldvorschriften**

## § 98

(aufgehoben)

## § 99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entgegen § 4 Abs. 1 oder 4 den wesentlichen Inhalt des Vertrages oder seine wesentlichen Änderungen nicht schriftlich niederlegt,
2. entgegen § 4 Abs. 3 oder 4 dem Auszubildenden oder dessen gesetzlichem Vertreter die unterzeichnete Niederschrift nicht aushändigt,
3. dem Auszubildenden Aufgaben überträgt, die dem Ausbildungszweck nicht dienen,
4. entgegen § 7 dem Auszubildenden die für die Teilnahme am Berufsschulunterricht, an Prüfungen oder an Ausbildungsmaßnahmen außerhalb der Ausbildungsstätte erforderliche Zeit nicht gewährt,
5. Auszubildende einstellt oder ausbildet, obwohl er nach § 20 Abs. 2 Nr. 1 persönlich oder nach § 20 Abs. 3 fachlich nicht geeignet ist,
6. entgegen § 20 Abs. 4 einen Ausbilder bestellt, obwohl dieser nach § 20 Abs. 2 Nr. 1 persönlich oder nach § 20 Abs. 3 fachlich nicht geeignet ist oder diesem die Ausbildung nach § 24 untersagt worden ist,
7. Auszubildende einstellt oder ausbildet, obwohl ihm das Einstellen oder Ausbilden nach § 24 untersagt worden ist,
8. entgegen § 33 die Eintragung in das Verzeichnis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beantragt oder eine Ausfertigung der Vertragsniederschrift nicht beifügt,
9. entgegen § 45 Abs. 1 Satz 3 der zuständigen Stelle oder ihrem Beauftragen eine Auskunft nicht, nicht rechtzeitig, unrichtig oder

unvollständig erteilt, Unterlagen nicht vorlegt oder eine Besichtigung nicht gestattet.

10. (aufgehoben)

## §§ 100 bis 107

(gegenstandslos)

## § 108

**Fortgeltung bestehender Regelungen**

(1) Die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anerkannten Lehrberufe und Anlernberufe oder vergleichbar geregelten Ausbildungsberufe gelten als Ausbildungsberufe im Sinne des § 25 Abs. 1. Die Berufsbilder, die Berufsbildungspläne, die Prüfungsanforderungen und die Prüfungsordnungen für diese Berufe sind bis zum Erlass der Ausbildungsordnungen nach § 25 Abs. 1 und der Prüfungsordnungen nach § 41 anzuwenden.

(2) Die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rteilten Prüfungszeugnisse in Berufen, die nach Absatz 1 als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gelten, stehen Prüfungszeugnissen nach § 34 Abs. 2 gleich.

## §§ 109 bis 113

(gegenstandslos)

**Gesetz  
über Berufsschulen  
vom 19. Juli 1990**

## § 1

**Grundsätze**

(1) Dieses Gesetz regelt die Aufgaben, die Errichtung und die Finanzierung von Berufsschulen bis zum Erlass von Schulgesetzen durch die Länder.

(2) Berufsschulen sind öffentliche Schulen. Die Träger der Berufsschulen sind die Kreise und die kreisfreien Städte. Berufsschule, Unternehmen, Wirtschaft und ihre Organisationen arbeiten bei der Gestaltung dieses Gesetzes vertrauensvoll zusammen.

## § 2

**Aufgaben der Berufsschule**

(1) Die Berufsschule hat die Aufgabe, den zur Erlangung einer beruflichen Qualifikation erforderlichen berufsbildenden Unterricht zu erteilen sowie die allgemeine Bildung zu vertiefen und zu erweitern.

(2) Die Berufsschule vermittelt die für den Ausbildungsberuf erforderlichen fachtheoretischen Kenntnisse und ergänzt die fachpraktischen Kenntnisse und Fertigkeiten (Berufsschulunterricht).

(3) Für Berufsschulpflichtige ohne Berufsausbildungsverhältnis vermittelt die Berufsschule allgemeinbildende und berufsbildende Kenntnisse und Fertigkeiten.

(4) Die Aufgaben gemäß Absätze 1 bis 3 sind auch für Behinderte an mindestens einer Berufsschule durch den Träger zu gewährleisten.

## § 3

**Berufsschulpflicht**

(1) Wer in einem Berufsausbildungsverhältnis steht, ist berufsschulpflichtig. Die Berufsschulpflicht ist an der für den Ausbildungsort örtlich und fachlich zuständigen Berufsschule zu erfüllen.

(2) Wer sich nicht in einem Berufsausbildungsverhältnis bzw. Arbeitsverhältnis befindet oder keine andere Schule besucht, ist nach

Verlassen der zehnklassig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ein Jahr berufsschulpflichtig.

## § 4

**Lehrpersonal**

(1) Berufsschulunterricht wird durch Lehrkräfte erteilt, die die dafür erforderliche fachliche und pädagogische Qualifikation erlangt haben.

(2) Andere Personen können unter Berücksichtigung ihrer Ausbildung und Berufserfahrung für begrenzte Zwecke und/oder vorübergehend zur Unterrichtserteilung durch den Träger eingesetzt werden.

## § 5

**Organisation des Unterrichts**

(1) Der Unterricht wird in aufsteigenden Jahrgangsklassen für Auszubildende eines Ausbildungsberufes oder mehrerer verwandter Ausbildungsberufe erteilt. Er wird entweder an einzelnen Unterrichtstagen oder als Blockunterricht erteilt. Der Unterricht kann im ersten Ausbildungsjahr auch als Vollzeitunterricht erteilt werden (Berufsgrundbildungsjahr).

(2) Für Berufsschulpflichtige ohne Berufsausbildungsverhältnis ist der Unterricht auch in Vollzeitform anzubieten.

(3) Die zuständige oberste Behörde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Regelungen über den Unterricht in Vollzeitform nach § 5 Abs. 1 Satz 3 und Abs. 2 zu treffen.

## § 6

**Grundlagen des Unterrichts**

(1) Der Unterricht für Auszubildende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im Sinne des Berufsbildungsgesetzes und der Handwerksordnung) erfolgt nach den von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chlossenen Rahmenlehrplänen. Diese Rahmenlehrpläne können durch die Länder der DDR ergänzt werden. Bestehen solche Rahmenlehrpläne nicht, bestimmt die zuständige oberste Behörde die Unterrichtsinhalte.

(2) Der Unterricht und die Prüfungen für Auszubildende in Facharbeiterberufen entsprechend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der DDR erfolgt nach den dafür geltenden Ausbildungsunterlagen und Prüfungsbestimmungen.

(3) Der allgemeinbildende Unterricht erfolgt nach den von der zuständigen obersten Behörde erlassenen Regelungen. Allgemein- und berufsbildende Lerninhalte sind zu verbinden.

(4) Die zuständige oberste Behörde erläßt Regelungen über die Studentafeln und die Erteilung von Zeugnissen.

(5) Eine gesonderte Schulabschlußprüfung neben der Facharbeiterprüfung findet nicht statt.

## § 7

**Errichtung von Berufsschulen**

(1) Die Träger sind verpflichtet, Berufsschulen zum 1. September 1990 zu errichten. Sie tragen die Verantwortung für die Organisation und Verwaltung der Berufsschulen. Mehrere Träger können gemeinsam Berufsschulen errichten.

(2) Staatsunternehmen können nach Zustimmung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Träger von Berufsschulen sein.

(3) Der Träger ist verpflichtet, für die Auszubildenden des Einzugsbereiches den Unterricht im erforderlichen Umfang sicherzustellen. Reicht die Anzahl der Auszubildenden nicht aus, eine Fachklassenbesetzung sicherzustellen, sind Fachklassen von Auszubildenden mehrerer Einzugsbereiche zu bilden. Dazu stimmen sich benachbarte Träger ab.

(4) Die zuständige oberste Behörde kann überregionale Fachklassen bilden und sie bestimmten Trägern zuordnen.

(5) Die Errichtung von Berufsschulen in Ausnahmefällen durch Unternehmen (Ersatzschulen) bedarf der Genehmigung durch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Träger sind gehalten, dieses bei der Errichtung von Berufsschulen zu berücksichtigen.

## § 8

(1) Die Betriebsberufsschulen und kommunalen Berufsschulen sind zum 31. August 1990 aufgelöst. Die Betriebsschulen sind ab 1. September 1990 für den theoretischen Unterricht der Lehrlinge nicht mehr zuständig. Ausnahmen von Satz 1 und Satz 2 regelt § 7 Abs. 2. Die Ausbildungs- und Kooperationsverträge bleiben hinsichtlich der praktischen Berufsausbildung unberührt.

(2) Grund und Boden sowie Gebäude (die bisher für den theoretischen Unterricht der Lehrlinge genutzt wurden) und das dazugehörige Inventar der Betriebsberufsschule, Betriebsschule und kommunalen Berufsschule gehen mit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in die Rechtsträgerschaft des örtlich zuständigen Trägers der Berufsschule kostenlos über<sup>1</sup>. Ist eine Aussonderung aus der Wirtschaftseinheit des bisherigen Trägers räumlich nicht möglich, sind dem Träger der Berufsschule die bisher für den theoretischen Unterricht der Lehrlinge genutzten Einrichtungen zur Nutzung gegen Erstattung anteiliger Betriebskosten zur Verfügung zu stellen.

(3) Die Lehrlingswohnheime sind dem Träger spätestens bis zum 31. Dezember 1990 kostenlos zur Nutzung zu übergeben. Lehrlingswohnheime, die als solche nicht weiter genutzt werden, können von den Trägern einer anderen öffentlichen Nutzung zugeführt werden. Wohnrechte der Lehrlinge bleiben erhalten.

(4) Der theoretischen Berufsausbildung dienende Einrichtungen, einschließlich Lehrlingswohnheime sowie der zugehörige Grund und Boden, gehören nicht zur Konkursmasse und gehen im Falle des Konkurses in die Rechtsträgerschaft des örtlich zuständigen Trägers über.

(5) Die Arbeitsverhältnisse der Lehrkräfte für den Berufsschulunterricht der Lehrlinge und der Erzieher an übernommenen Einrichtungen regeln sich nach § 59a AGB.<sup>2</sup>

## § 9

**Kostenträgerschaft**

(1) Beim Betrieb und der Unterhaltung von Berufsschulen werden die Träger vom Staat unterstützt.

(2) Der Staat trägt die Kosten des Lehrpersonals.

(3) Bis zur Regelung durch Ländergesetze trägt der Staat auch die übrigen Kosten, insbesondere die für den ordnungsgemäßen Schulbetrieb und den erforderlichen Sachaufwand sowie den Aufwand für das sonstige Personal.

(4) Schulgeld wird nicht erhoben.

## § 10

**Aufsicht über die Berufsschulen**

Die Aufsicht über die Berufsschulen hat der Staat.<sup>3</sup>

<sup>1</sup> Vgl. § 1 Abs. 1 des Gesetzes vom 17. Juni 1990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Treuhandsatz) (GBl. I Nr. 33 S. 300) § 1 Abs. 2 Satz 2 des Treuhandsatzes findet insoweit auch auf die Kreise Anwendung.

<sup>2</sup> Zur Zeit gilt Arbeitsgesetzbuch der DDR i. d. F. des Gesetzes vom 22. Juni 1990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Arbeitsgesetzbuches (GBl. I Nr. 35 S. 371).

<sup>3</sup> Zur Zeit gilt die Verordnung vom 30. Mai 1990 über die Bildung von vorläufigen Schulaufsichtsbehörden (GBl. I Nr. 32 S. 296).

## § 11

**Berufsausbildung mit  
erweitertem allgemeinbildenden Unterricht**

(1) Der Träger gewährleistet an mindestens einer Berufsschule den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Unterricht für die Jugendlichen, die einen Lehrvertrag über ei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mit Betrieben des Einzugsbereiches abgeschlossen haben.

(2)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s Gesetzes abgeschlossene Lehrverträge über ei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werden nach den neu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es sei denn, daß die Durchführung nach den neuen Vorschriften nicht möglich ist oder der Lehrling eine Fortsetzung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ausdrücklich wünscht.

## § 12

**Koordinierungsausschuß für Berufsbildung**

(1) Beim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wird ein Koordinierungsausschuß für Berufsbildung gebildet. Er hat die Aufgabe, die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rangig in Fragen der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im Prozeß der Übernahme der Verantwortung durch die künftigen Länderregierungen zu beraten.

(2) Der Ausschuß setzt sich aus je einem Beauftragten der Bezirke/der Länder, einem Beauftragten der Arbeitnehmer und einem

Beauftragten der Arbeitgeber sowie aus Vertreter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zusammen.

## § 13

**Inkrafttreten**

(1) Dieses Gesetz tritt mit sein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treten außer Kraft:

1. Anordnung vom 14. März 1974 über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GBl. I Nr. 18 S. 177),
2. Direktive vom 14. März 1974 über Bezeichnungen und Strukturen der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Staatssekretariats für Berufsbildung Nr. 5 S. 52),
3. Anordnung vom 15. April 1986 über die Kooperation der Betriebe auf dem Gebiet der Berufsbildung und die Entwicklung des Netzes der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GBl. I Nr. 18 S. 276),
4. Anweisung vom 3. Juli 1978 zum allgemeinbildenden Unterricht für berufsschulpflichtige Jugendliche, die keinen Lehrvertrag abgeschlossen haben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Staatssekretariats für Berufsbildung Nr. 8 S. 65).

(3) Darüber hinaus sind alle Vorschriften und Bestimmungen, die diesem Gesetz widersprechen, nicht mehr anzuwenden.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zehnten Jul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zehnten Jul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Gesetz**

**zum Schutz der Berufsbezeichnung Architekt und zur  
Vorbereitung der Errichtung von Architektenkammern  
in den künftigen Länder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Architektengesetz —  
vom 19. Juli 1990**

## § 1

**Geltungsbereich**

(1) Dieses Gesetz regelt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Führung der Berufsbezeichnung Architekt, Innenarchitekt, Garten- und Landschaftsarchitekt und Architekt für Stadtplanung sowie die einzuleitenden Maßnahmen zur Errichtung von Architektenkammern.

(2) Dieses Gesetz gilt für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eine Berufsbezeichnung gemäß § 3 führen wollen, sowie für auswärtige Architekten, die in der DDR tätig werden.

## Erster Teil

**Die Befugnis zur Führung der Berufsbezeichnung  
„Architekt“**

## § 2

**Berufsaufgaben, Fachrichtungen**

(1) Die Berufsaufgaben eines Architekten sind in den Fachrichtungen:

1. **Architektur:** Bauwerke, insbesondere Gebäude einschließlich Innenräume, baukünstlerisch, technisch, wirtschaftlich, sicher, sozial verträglich und zweckmäßig zu planen und zu gestalten,
2. **Innenarchitektur:** Innenräume, insbesondere raumbildende Ausbauten und damit verbundene Änderungen von Gebäuden, baukünstlerisch, zweckmäßig, technisch und wirtschaftlich zu planen und zu gestalten,
3. **Garten- und Landschaftsarchitektur:** Landschaft, Gärten und Freianlagen einschließlich damit verbundener Bauwerke ökologisch, technisch, wirtschaftlich und gartenbaukünstlerisch zu planen und zu gestalten,
4. **Stadtplanung:** die Orts- und Stadtplanung, insbesondere die städtebauliche Planung, so zu gestalten, daß die stadtgestalterischen, ökologischen, technischen,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Belange berücksichtigt werden und darüber hinaus in der Lage ist, an Aufgaben der Landesplanung und Raumordnung sowie an Landschaftsrahmenplänen und Umweltverträglichkeitsstudien mitzuwirken.

(2) Zu den Berufsaufgaben der Architekten aller Fachrichtungen gehören auch die Beratung, Betreuung und Vertretung des Auftraggebers in den mit der Planung und Durchführung eines Vorhabens zusammenhängenden Fragen, die Koordinierung und Überwachung der Ausführung sowie die Einhaltung des öffentlichen Baurechts.

(3) Zu den Berufsaufgaben der Architekten in den Fachrichtungen Architektur sowie Garten- und Landschaftsarchitektur gehören auch die Ausarbeitung städtebaulicher Pläne und die Mitwirkung an Landesplanung, Raumordnung, Landschaftsrahmenplänen sowie an Umweltverträglichkeitsstudien.





문서 번호 14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서도 유효함을 규정하는 법

1990년 7월 19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인민의회 의장, 자비네 베르크만-폴

내용:

이 문서는 화폐통합 이후 서독의 직업교육법이 동독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직업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독(서독)의 법률규정들이 동독(동독)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의 견습관계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견습생이 원할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명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체는 기존에 체결된 견습계약들이 만료될 때까지는 직업교육생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직업아카데미와 사업체 부설 다른 직업재교육기관의 경우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0 - Ausgabetag: 13. August 1990





# GESETZBLATT

##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907

1990

Berlin, den 13. August 1990

Teil I Nr. 50

Tag	Inhalt	Seite
19. 7. 90	<b>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IGBBiG –</b>	
19. 7. 90	<b>Gesetz über Berufsschulen</b>	
19. 7. 90	<b>Gesetz zum Schutz der Berufsbezeichnung Architekt und zur Vorbereitung der Errichtung von Architektenkammern in den künftigen Länder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Architektengesetz –</b>	921
20. 7. 90	<b>Gesetz über die Bauordnung (BauO)</b>	929
20. 7. 90	<b>Gesetz zur Einführung des Gesetzes vom 20. Juli 1990 über die Bauordnung (BauO)</b>	950
4. 7. 90	<b>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öffentlicher Spielcasinos – Spielcasinoverordnung –</b>	952
18. 7. 90	<b>Bekanntmachung über das Inkrafttreten des Vertrage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b>	953



###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IGBBiG – vom 19. Juli 1990

#### Artikel 1

#####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1) Das Berufsbild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BiG) vom 14. August 1969 (BGBl. I S. 1112), zuletzt geändert durch das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vom 23. Dezember 1981 (BGBl. I S. 1692), wir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 Maßgabe d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Vorschriften in Kraft gesetzt.

(2) Das Berufsbildungsgesetz wird gemeinsam mit diesem Gesetz im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eröffentlicht.

#### Artikel 2

##### Inkraftsetzung von Rechtsverordnungen

(1) Die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gemäß Artikel 1 erfaßt auch die auf der Grundlage des Berufsbildungsgesetzes erlassenen Rechtsverordn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eit nachfolgend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ies gilt auch für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 108 Abs. 1 des Berufsbildungsgesetzes staatlich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sup>1</sup>.

(2) Änderungen von Rechtsverordnungen gemäß Absatz 1 sowie Rechtsverordnungen, die auf der Grundlage des Berufsbildungsgesetz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rlassen werden, gelten, soweit nachfolgend nichts anderes bestimmt ist,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up>1</sup> Über die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 wird ein Verzeichnis geführt, das jährlich im Bundesanzeiger veröffentlicht wird.

(3) Rechtsverordnungen gemäß den §§ 21, 29 und 43 werden angewendet, wenn dies durch Rechtsvorschrift des zuständigen Ministers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estimmt wird.

#### Artikel 3

##### Maßgaben zu einzelnen Vorschriften

(1) Abweichend von § 2 Abs. 2 Nr. 2 gilt das BBiG für die Berufsbildung auf Kauffahrteischiffen (Handelsschiffe sowie Schiffe der großen Hochseefischerei) bis zum Inkrafttreten des Seemannsgesetzes. Die zur Berufsbildung im Sinne des § 2 Abs. 2 Nr. 2 erlassenen rechtlichen Regel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n auch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2) Bei der Anwendung des § 3 Abs. 3 ist § 104 Abs. 1 des Familiengesetzbuch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maßgebend.

(3) Die Höhe der anrechnungsfähigen Sachleistungen im Sinne von § 10 Abs. 2 richtet sich nach den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4) Bei der Anwendung des § 10 Abs. 3 bleibt das arbeitsrechtliche Überstundenverbot für Auszubildende unberührt.

(5) Die zuständige Stelle kann Ausnahmen von den Ausbildungsordnungen nach § 25 Berufsbildungsgesetz/§ 25 Handwerksordnung (HWO) zulassen, wenn die durch technische Regeln gesetzten Anforderungen noch nicht erfüllt werden können. Die Ausnahmen sind zu befristen.

(6) Regelungen in Ausbildungsordnungen nach § 27 über die 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werden nicht angewendet, wenn die zuständige Stelle feststellt, daß eine solche Ausbildung nicht möglich ist.

(7) Bei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bestehende Lehrverhältnisse werden nach den neu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sup>1</sup>, es sei denn, daß die Durchführung nach den neuen Vorschriften nicht möglich ist oder der Lehrling eine Fortsetzung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ausdrücklich wünscht. Sofern die Beendigung des Lehrverhältnisses nach den neuen Ausbildungsordnungen im bisherigen Betrieb nicht möglich ist, ist das zuständige Arbeitsamt und die zuständige Stelle verpflichtet, den Lehrling zu unterstützen, einen neuen Ausbildungsbetrieb zu finden, der die Ausbildung nach den neuen Ausbildungsordnungen fortsetzt.

(8) Die Ausbildungszeit sollte nach § 29 Abs. 3 verlängert werden, soweit ei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durchgeführt wird.

(9) Der Bezug in § 32 auf das Jugendarbeitsschutzgesetz entfällt.

(10) Wer nach § 45 Abs. 2 berechtigt ist, die Auskunft zu verweigern, richtet sich nach den strafverfahrensrechtlichen 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1) Beim Erlaß von Rechtsvorschriften durch die zuständige Stelle ist spätestens ab 1. Januar 1991 das Verfahren nach § 58 Abs. 2 zu gewährleisten.

(12) Soweit in Unternehmen der DDR eine Berufsausbildung durchgeführt wird, für die nach § 83 dieses Gesetz nicht gilt, kann durch das jeweils fachlich zuständige Ministerium in Übereinstimmung mit dem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is zur Regelung einer Laufbahnausbildung als Beamter die Ausbildung auf der Grundlage der Ausbildungsunterlagen der bisherigen Facharbeiterberufe fortgesetzt werden.

(13) An die Stelle der obersten Bundesbehörde nach § 84 tritt das jeweils fachlich zuständige Ministerium.

(14) Im Falle des § 93 bestimmt der 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 die zuständige Stelle durch Rechtsvorschrift.

(15) Die Anwendung der §§ 76, 77, 80, 81, 82, 86, 88, 90, 92, 94, 95 und 96 bestimmt der jeweils fachlich zuständige Minister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orschrift.

(16) Die Ordnungswidrigkeiten gemäß § 99 können mit Ordnungsstrafe bis zu 1 000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Die Durchführung des Ordnungsstrafverfahrens obliegt dem Leiter der zuständigen Verwaltungsbehörde und regelt sich nach dem Gesetz vom 12. Januar 1968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G — (GBl. I Nr. 3 S. 101).

(17) Die §§ 100 bis 107 und §§ 109 bis 113 finden keine Anwendung.

(18) An die Stelle des Bundesausschusses für Berufsbildung ist nach § 19 Abs. 1 Satz 2 des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es der Hauptausschuß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getreten.

#### Artikel 4

##### Übergangsregelungen

(1) Bis zur Bildung entsprechender Landesbehörden werden die Aufgaben der obersten Landesbehörde und der nach Landesrecht zuständigen Behörde von dem jeweils fachlich zuständigen Ministerium wahrgenommen.

(2) Die Betriebe sind verpflichtet, die Kapazitäten der praktischen Berufsausbildung zweckentsprechend, mindestens bis zum Zeitpunkt der Erfüllung abgeschlossener Lehrverträge, aufrechtzuerhalten. Für Betriebsakademien und andere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dienende Einrichtungen ist dies mindestens bis zum 31. Dezember 1990 zu gewährleisten. Auf Antrag der Handwerkskammern und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ist durch die Betriebe zu prüfen, inwieweit vorhandene Kapazitäten der praktischen Berufsausbildung (insbesondere Lehrwerkstätten) als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genutzt werden oder als Treuhandvermögen an die vorgenannten Kammern zur Nutzung übertragen werden können.

<sup>1</sup> Notwendige Änderungen des Lehrvertrages sind durch Änderungsvertrag vorzunehmen.

Das vorstehende, vo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neunzehnten Juli neunzehnhundertneunzig beschlossen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Berlin, den neunzehnten Juli neunzehnhundertneunzig

Die Präsidentin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gmann-Pohl

(3) Solange die in § 79 genannten zuständigen Stellen nicht bestehen, werden ihre Aufgaben von den Agrarverwaltungen der Bezirksverwaltungsbehörden wahrgenommen.

(4) Solange die in §§ 87, 89 und 91 genannten zuständigen Stellen nicht bestehen, werden ihre Aufgaben von den Schulämtern der Kreise wahrgenommen, für den Bereich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beruflichen Umschulung bestimmt die zuständige oberste Behörde die Zuständigkeit.

(5) Für Lehrlinge, die ihre Berufsausbildung am 1. September 1990 beginnen, kommt § 13 nicht zur Anwendung.

(6) Lehrlinge, die ihre Berufsausbildung nach Ausbildungsunterlagen für Facharbeiterberufe gemäß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absolvieren, werden nach den bisherigen Rechtsvorschriften geprüft, soweit nicht d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Übergangsvorschriften für Verfahren und Zuständigkeit erläßt.

(7) Für junge Erwachsene, die eine Ausbildung nach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der DDR absolviert haben und zusätzlich einen Abschluß in einem damit verwandte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oder der Handwerksordnung erwerben wollen, sollen Betriebe, zuständige Stellen und Träger sonstiger Bildungseinrichtungen entsprechende Maßnahmen entwickeln und anbieten.

(8) Die auf der Grundlage von zwischenstaatlichen Vereinbarungen durchgeführte berufliche Aus- und Weiterbildung von Ausländern in der DDR wird von diesem Gesetz nicht berührt.

(9) Prüfungszeugnisse nach der Systematik der Ausbildungsberufe und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stehen Prüfungszeugnissen nach § 34 Abs. 2 gleich.

#### Artikel 5

##### Inkrafttreten

(1) Dieses Gesetz tritt mit sein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Gleichzeitig treten außer Kraft:

6. Kapitel des Arbeitsgesetzbuch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16. Juni 1977 (GBl. I Nr. 18 S. 585) i. d. F. des Gesetzes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Arbeitsgesetzbuch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Juni 1990 (GBl. I Nr. 35 S. 371);
- Fünfter Teil des Gesetzes vom 25. Februar 1965 über das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 (GBl. I Nr. 6 S. 83);
- Verordnung vom 29. November 1979 über die Verantwortung und die Aufgaben bei der Leitung der Berufsbildung (GBl. I Nr. 44 S. 448);
- Verordnung vom 29. November 1979 über die staatliche Inspektionstätigkeit in der sozialistischen Berufsbildung (GBl. I Nr. 44 S. 453);
- §§ 1 bis 7 und §§ 9 bis 10 der Anordnung vom 15. Dezember 1977 über das Lehrverhältnis (GBl. I 1978 Nr. 2 S. 42);
- Anweisung vom 25. September 1986 über den Abschluß von Lehrverträgen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Staatssekretariats für Berufsbildung Nr. 10 S. 157);
- Anordnung vom 10. Dezember 1981 über die Lehrproduktion und Ausbildungsplätze für die Berufsausbildung der Lehrlinge (GBl. I 1982 Nr. 6 S. 137);
- Anordnung vom 5. Januar 1982 über die Bewerbung um eine Lehrstelle — Bewerbungsordnung — (GBl. I Nr. 4 S. 95);
- Anordnung (Nr. 1) vom 15. Mai 1986 über die Facharbeiterprüfung (GBl. I Nr. 21 S. 309) i. d. F. der Anordnung Nr. 2 vom 31. Januar 1990 (GBl. I Nr. 11 S. 90), sofern nicht die Ausbildung auf der Grundlage bestehender und nicht geänderter Lehrverträge erfolgt.

(3) Darüber hinaus sind alle Vorschriften und Bestimmungen, die diesem Gesetz widersprechen, nicht mehr anzuwenden.

문서 번호 15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의 일반학교교육 재개에 대한 지시

1990 년 8 월 14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전인 1990 년에 여름방학 이후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동독 교육부 장관이 8 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중에 직업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서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등단계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90 학년도에 학교를 떠났으나 아직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있거나 미고용상태인 청소년들은 1990/91 학년도에 일반학교에 재입학하여, 다음 단계의 학급과정 수료하거나 최소한 마지막 받았던 수업단계를 끝까지 수료할 수 있다. 10 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미고용상태일 경우 이들은 상응하는 수행능력을 전제로 11 학년으로 확대일반고등학교 (EOS)에 전입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재입학을 위한 절차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 Gesetzblatt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Anordnung  
über den weiteren Besuch allgemeinbildender Schulen  
durch Jugendliche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vom 14. August 1990**

Für das Schuljahr 1990/91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 folgendes angeordnet:

§ 1

**Geltungsbereich**

Diese Anordnung gilt für die erneute Aufnahme von Jugendlichen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die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nach Ablauf des Schuljahres 1989/90 verlassen haben, in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 2

**Grundsätze**

(1) Abgänger allgemeinbildender Schulen, die nicht das Ziel der Klasse 10 erreicht haben (nachfolgend vorzeitige Schulabgänger genannt) und kein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aufnehmen, haben das Recht, ab 1. September 1990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mit dem Ziel weiter zu besuchen, den Abschluß der nächsthöheren Klassenstufe zu erreichen oder zumindest die zuletzt besuchte Klassenstufe erfolgreich abzuschließen.

(2) Die Direktoren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n sind verpflichtet, vorzeitigen Abgängern, die kein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aufnehmen, die Fortsetzung des Schulbesuches zu ermöglichen.

(3) Absolventen der 10. Klasse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können bei entsprechenden Leistungsvoraussetzungen nachträglich in die Klassen 11 ein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aufgenommen werden.

§ 3

**Wiederaufnahmeverfahren**

(1) Die Arbeitsämter bieten vorzeitigen Schulabgängern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neben den Möglichkeiten einjähriger Bildungsgänge an Berufsschulen (Berufsvorbereitungs- oder Berufsgrundbildungsjahr) die Fortsetzung des Besuches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an.

(2) Für den weiteren Besuch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können die Eltern einen formlosen Antrag beim Direktor der örtlich zuständigen allgemeinbildenden Schule stellen.

(3) Der Direktor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entscheidet innerhalb von 10 Tagen nach Eingang des Antrages, in welche Klasse der vorzeitige Schulabgänger eingegliedert wird.

(4) Kann die Aufnahme nicht in der Schule erfolgen, bei der der Antrag gestellt wurde, ist der Antrag unverzüglich mit Begründung an den Leiter des Schulamtes des Kreises weiterzuleiten, um innerhalb von 10 Tagen andere Aufnahmemöglichkeiten im Territorium anzubieten.

(5) Nach Bestätigung des Antrages sind die Schüler verpflichtet, die Schule für mindestens ein Schuljahr weiter zu besuchen.

§ 4

**Nachträgliche Aufnahme in die Klasse 11**

(1) Absolventen der Klasse 10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die

aufgrund ihrer schulischen Leistungen, ihrer Leistungsfähigkeit und ihrer Leistungsbereitschaft für den Erwerb des Abiturs geeignet erscheinen, können nachträglich in die Klasse 11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aufgenommen werden.

(2) Die Schüler können entsprechend § 3 der Aufnahmeanordnung einen formlosen Antrag auf Aufnahme in die Klassen 11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stellen.<sup>1</sup>

(3) Der Direktor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entscheidet nach den Grundsätzen der Aufnahmeanordnung innerhalb von 10 Tagen über den Antrag. Im übrigen gelten die Regelungen des § 6 der Aufnahmeanordnung.

§ 5

Die Wiederaufnahme bzw. die nachträgliche Aufnahme von Jugendlichen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in eine allgemeinbildende Schule erfolgt grundsätzlich zum 3. September 1990. In Ausnahmefällen kann sie auch noch bis zum 24. September 1990 erfolgen.

§ 6

Diese Anordnung tritt am Tag nach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14. August 1990

**D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Prof. Dr. Hans Joachim Meyer**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jähriger Bildungsgänge  
für Jugendliche an Berufsschulen  
vom 14. August 1990**

Auf der Grundlage des § 5 des Gesetzes vom 19. Juli 1990 über Berufsschulen (GBl. I Nr. 50 S. 919)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Geltungsbereich**

Diese Anordnung gilt für

- Jugendliche, die sich nicht in einem Berufsausbildungs- bzw. Arbeitsverhältnis befinden, keine andere Schule besuchen, nicht in eine Maßnahme nach § 40 c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AFG) vom 22. Juni 1990 (GBl. I Nr. 36 S. 403) vermittelt werden können und ihre Berufsschulpflicht durch den Besuch eines Berufsvorbereitungsjahres, eines Berufsgrundbildungsjahres oder ein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absolvieren (im folgenden Berufsschüler genannt),
- Berufsschulen und Fachschulen,
- Schulämter der Kreise.

§ 2

**Grundsätze**

(1) An Berufsschulen können einjährige vollzeitschulische Bildungsgänge für Jugendliche gemäß § 1 eingerichtet werden. Sie sind als Möglichkeit der Vorbereitung auf eine berufliche Eingliederung bei gleichzeitiger Erfüllung der Berufsschulpflicht Jugendlichen anzubieten.

<sup>1</sup> Zur Zeit gilt die Anordnung vom 28. Februar 1990 zur Aufnahme von Schülern in Klassen 11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sowie zur Aufnahme einer Berufsausbildung mit Abitur — Aufnahmeanordnung — (GBl. I Nr. 15 S. 123).





문서 번호 16

직업학교 내 청소년 대상 1 년기간 교육과정설치에 대한 지시 - 동독 교육·학술부

1990 년 8 월 14 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장관이 통일 직전에 내린 조치로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특별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학교에 1 년 기간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거나 무직업 상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직업세계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소요될 재원은 직업학교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1990 년 9 월에 새로 시작되는 견습 및 직업교육 학년도부터 실시되며, 통일 이후 구축될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방주들이 자체적인 학교법을 제정하는 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Gesetzblatt der DDR Teil I Nr. 57 - Ausgabetag: 4. September 1990



**Anordnung  
über den weiteren Besuch allgemeinbildender Schulen  
durch Jugendliche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vom 14. August 1990**

Für das Schuljahr 1990/91 wird im Einvernehmen mit dem 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 folgendes angeordnet:

§ 1

**Geltungsbereich**

Diese Anordnung gilt für die erneute Aufnahme von Jugendlichen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die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nach Ablauf des Schuljahres 1989/90 verlassen haben, in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 2

**Grundsätze**

(1) Abgänger allgemeinbildender Schulen, die nicht das Ziel der Klasse 10 erreicht haben (nachfolgend vorzeitige Schulabgänger genannt) und kein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aufnehmen, haben das Recht, ab 1. September 1990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mit dem Ziel weiter zu besuchen, den Abschluß der nächsthöheren Klassenstufe zu erreichen oder zumindest die zuletzt besuchte Klassenstufe erfolgreich abzuschließen.

(2) Die Direktoren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n sind verpflichtet, vorzeitigen Abgängern, die kein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aufnehmen, die Fortsetzung des Schulbesuches zu ermöglichen.

(3) Absolventen der 10. Klasse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können bei entsprechenden Leistungsvoraussetzungen nachträglich in die Klassen 11 ein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aufgenommen werden.

§ 3

**Wiederaufnahmeverfahren**

(1) Die Arbeitsämter bieten vorzeitigen Schulabgängern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neben den Möglichkeiten einjähriger Bildungsgänge an Berufsschulen (Berufsvorbereitungs- oder Berufsgrundbildungsjahr) die Fortsetzung des Besuches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an.

(2) Für den weiteren Besuch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können die Eltern einen formlosen Antrag beim Direktor der örtlich zuständigen allgemeinbildenden Schule stellen.

(3) Der Direktor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entscheidet innerhalb von 10 Tagen nach Eingang des Antrages, in welche Klasse der vorzeitige Schulabgänger eingegliedert wird.

(4) Kann die Aufnahme nicht in der Schule erfolgen, bei der der Antrag gestellt wurde, ist der Antrag unverzüglich mit Begründung an den Leiter des Schulamtes des Kreises weiterzuleiten, um innerhalb von 10 Tagen andere Aufnahmemöglichkeiten im Territorium anzubieten.

(5) Nach Bestätigung des Antrages sind die Schüler verpflichtet, die Schule für mindestens ein Schuljahr weiter zu besuchen.

§ 4

**Nachträgliche Aufnahme in die Klasse 11**

(1) Absolventen der Klasse 10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die

aufgrund ihrer schulischen Leistungen, ihrer Leistungsfähigkeit und ihrer Leistungsbereitschaft für den Erwerb des Abiturs geeignet erscheinen, können nachträglich in die Klasse 11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aufgenommen werden.

(2) Die Schüler können entsprechend § 3 der Aufnahmeanordnung einen formlosen Antrag auf Aufnahme in die Klassen 11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stellen.<sup>1</sup>

(3) Der Direktor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Oberschule entscheidet nach den Grundsätzen der Aufnahmeanordnung innerhalb von 10 Tagen über den Antrag. Im übrigen gelten die Regelungen des § 6 der Aufnahmeanordnung.

§ 5

Die Wiederaufnahme bzw. die nachträgliche Aufnahme von Jugendlichen ohne Berufsausbildungs- oder Arbeitsverhältnis in eine allgemeinbildende Schule erfolgt grundsätzlich zum 3. September 1990. In Ausnahmefällen kann sie auch noch bis zum 24. September 1990 erfolgen.

§ 6

Diese Anordnung tritt am Tag nach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14. August 1990

**D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Prof. Dr. Hans Joachim Meyer**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jähriger Bildungsgänge  
für Jugendliche an Berufsschulen  
vom 14. August 1990**

Auf der Grundlage des § 5 des Gesetzes vom 19. Juli 1990 über Berufsschulen (GBl. I Nr. 50 S. 919)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Geltungsbereich**

Diese Anordnung gilt für

- Jugendliche, die sich nicht in einem Berufsausbildungs- bzw. Arbeitsverhältnis befinden, keine andere Schule besuchen, nicht in eine Maßnahme nach § 40 c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AFG) vom 22. Juni 1990 (GBl. I Nr. 36 S. 403) vermittelt werden können und ihre Berufsschulpflicht durch den Besuch eines Berufsvorbereitungsjahres, eines Berufsgrundbildungsjahres oder ein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absolvieren (im folgenden Berufsschüler genannt),
- Berufsschulen und Fachschulen,
- Schulämter der Kreise.

§ 2

**Grundsätze**

(1) An Berufsschulen können einjährige vollzeitschulische Bildungsgänge für Jugendliche gemäß § 1 eingerichtet werden. Sie sind als Möglichkeit der Vorbereitung auf eine berufliche Eingliederung bei gleichzeitiger Erfüllung der Berufsschulpflicht Jugendlichen anzubieten.

<sup>1</sup> Zur Zeit gilt die Anordnung vom 28. Februar 1990 zur Aufnahme von Schülern in Klassen 11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sowie zur Aufnahme einer Berufsausbildung mit Abitur - Aufnahmeanordnung - (GBl. I Nr. 15 S. 123).

(2) Einjährige Bildungsgänge im Sinne dieser Anordnung sind das Berufsvorbereitungsjahr (insbesondere für Abgänger niederer Klassen), das Berufsgrundbildungsjahr und die Einjährige Berufsfachschule.

(3) Maßgebend für die fachliche Profilierung dieser Bildungsgänge sind:

- a) die individuellen Voraussetzungen und Interessen der in Frage kommenden Jugendlichen,
- b) die Wirtschafts- und Arbeitsmarktstruktur des Territoriums und
- c) das fachliche Profil der jeweiligen Berufsschule.

(4) Bildungsgänge im Sinne dieser Anordnung können auch an Fachschulen durchgeführt werden.

(5) Über die Einrichtung der Bildungsgänge gemäß Absatz 2 entscheiden die Schulämter der Kreise in Abstimmung mit den Arbeitsämtern und Kammern.

(6) Schüler und Eltern sind durch die Schulen und die Abteilungen Berufsberatung der Arbeitsämter über diese Bildungsgänge zu informieren. Ihnen ist bei der Auswahl des Bildungsganges zu helfen.

### § 3

#### Berufsvorbereitungsjahr

(1) Das Berufsvorbereitungsjahr vermittelt den Berufsschülern allgemeinbildende und fachliche Lerninhalte und bereitet sie auf eine Berufsausbildung vor. Sie werden befähigt, anschließend in ein Berufsausbildungsverhältnis oder ein Berufsgrundbildungsjahr einzutreten.

(2) Dem Berufsvorbereitungsjahr sind wöchentlich

2 Tage theoretischer Unterricht und

3 Tage fachpraktischer Unterricht

zugrunde zu legen. Je nach konkreten Bedingungen der Berufsschule ist bei Einhalt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Theorie und Praxis eine flexible Zeitplanung möglich. Unter Beachtung dieser Festlegung kann das Berufsvorbereitungsjahr vollzeitschulisch

- unter Nutzung von Kabinetten für die Fachpraxis oder
- in Zusammenarbeit mit Ausbildungsstätten, polytechnischen Zentren oder ähnlichen Einrichtungen durchgeführt werden.

(3) Als allgemeinbildende Lehrinhalte sollten Deutsch, Gesellschaftskunde und Sport vermittelt werden. Die fachtheoretischen und fachpraktischen Lerninhalte sind in der Regel auf zwei Berufsfelder (Anlage) zu beschränken. Sie sind auf die spezifischen Voraussetzungen dieser Berufsschüler auszurichten und den Rahmenlehrplänen für Berufsgrundbildungsjahre<sup>1</sup> zu entnehmen.

(4) Die Klassenfrequenz im Berufsvorbereitungsjahr sollte 20 Berufsschüler nicht überschreiten. Im fachpraktischen Unterricht sollte jede Klasse geteilt werden.

(5) Der Berufsschüler erhält eine Bescheinigung über die während der Ausbildung vermittelten Lerninhalte. Bei erfolgreichem Abschluß erhält er zusätzlich ein Schulzeugnis mit dem Feststellungsvermerk: „Der Besuch des Berufsvorbereitungsjahres wurde mit Erfolg abgeschlossen.“

### § 4

#### Berufsgrundbildungsjahr und Einjährige Berufsfachschule

(1) Das Berufsgrundbildungsjahr entspricht einem Teil der beruflichen Ausbildung in einem anerkannten und diesem Berufsfeld zugeordneten Ausbildungsberuf. Der Unterricht wird für ein Berufsfeld (Anlage) entsprechend dem jeweiligen Rahmenlehrplan<sup>1</sup> durchgeführt.

(2) In d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werden fachtheoretische und fachpraktische Kenntnisse und Fertigkeiten in der Breite eines Berufsfeldes oder in einem oder mehreren Ausbildungsbereichen oder in einem Vertiefungsbereich eines Berufsfeldes vermittelt.

(3) Als allgemeinbildende Inhalte sind mindestens Gesellschaftskunde (1 Std./Woche), Betriebswirtschaft (1 Std./Woche) und Sport (2 Std./Woche) zu vermitteln. Entsprechend dem Berufsfeld sollten darüber hinaus u. a. Deutsch, Mathematik, Fremdsprachen und Informatikunterricht in den Bildungsgang einbezogen werden.

(4) Entsprechend den konkreten Standortbedingungen der Berufsschule wird das Berufsgrundbildungsjahr und die Einjährige Berufsfachschule vollzeitschulisch

- unter Nutzung von Kabinetten für die Fachpraxis oder
- in Zusammenarbeit der Berufsschule mit Ausbildungsstätten, polytechnischen Zentren oder ähnlichen Einrichtungen

durchgeführt.

(5) Die Leistungen der Berufsschüler im Berufsgrundbildungsjahr und in d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sind zu bewerten. Eine Abschlußprüfung erfolgt nicht. Der Berufsschüler erhält ein Schulzeugnis.

(6) Für die Anrechnung des Berufsgrundbildungsjahres und d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auf die Dauer eines Berufsausbildungsverhältnisses des Jugendlichen kann der fachlich zuständige Minister in Abstimmung mit dem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ntsprechende Rechtsvorschriften erlassen.

### § 5

#### Bestätigung

(1) Für die Durchführung des Berufsvorbereitungsjahres, des Berufsgrundbildungsjahres und d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sind durch den Direktor der Berufsschule bzw. der anderen durchführenden Bildungseinrichtung dem Schulamt des Kreises

- Inhaltskonzeptionen,
- Stundentafel,
- Stundendeckung sowie der
- Kostenvoranschlag für den fachpraktischen Teil

zur Bestätigung vorzulegen.

(2) Über die Aufnahme der Jugendlichen in diese Bildungsgänge entscheidet in Abstimmung mit dem Schulamt des Kreises der Direktor der Berufsschule bzw. anderen durchführenden Bildungseinrichtung.

### § 6

#### Beihilfen

Die Ausbildungsbeihilfe für Berufsschüler im Berufsvorbereitungsjahr, Berufsgrundbildungsjahr und in d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bemißt sich nach der Regelung für Schüler der 11. Klasse der Erweiterten Oberschule.<sup>2</sup>

### § 7

#### Finanzierung

(1) Das Berufsvorbereitungs-, Berufsgrundbildungs- und Einjährige Berufsfachschuljahr wird im Rahmen der geplanten Mittel der Bildung aus öffentlichen Mitteln finanziert.

<sup>2</sup> Zur Zeit gilt die Verordnung vom 11. Juni 1981 über Ausbildungsbeihilfen für Schüler der erweitert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n sowie der Spezialschulen im Bereich der Volksbildung (GBl. I Nr. 17 S. 232).

<sup>1</sup> Beschlüsse der Kultusministerkonferen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Die Planung der finanziellen Mittel wird in den Haushaltsvoranschlag der Berufsschulen einbezogen. Bei der Aufstellung und Ausführung des Haushaltsvoranschlages sind die Grundsätze der 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 zu beachten.

(3) Der Haushaltsvoranschlag der Berufsschule wird auf der Grundlage der Haushaltsordnung der Republik nach Verteidigung im Schulamt des Kreises an das zuständige kreisliche Verwaltungsorgan eingereicht. Die Bereitstellung der Mittel erfolgt in Verantwortung der kreislichen Verwaltungsorgane.

(4) Die Berufsschulen sind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gemäß Körperschafts-, Gewerbe- und Vermögenssteuergesetz (GBl. Sonderdruck Nr. 671, 672 und 675) steuerbefreit.

(5) Der fachpraktische Unterricht wird vorrangig an den Berufsschulen unter Nutzung von Kabinetten u. a. kommunalen Einrichtungen der Polytechnik durchgeführt. In besonderen Fällen kann die Durchführung des fachpraktischen Unterrichts auch an 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oder betrieblichen Einrichtungen der Polytechnik erfolgen. Der fachpraktische Unterricht wird entsprechend § 7 Abs. 1 aus öffentlichen Mitteln finanziert.

(6) Die Planung der erforderlichen Mittel für die Durchführung des fachpraktischen Unterrichts wird in Abstimmung mit den Berufsschulen an den kommunalen Bildungseinrichtungen auf der Grundlage der Kostenvoranschläge vorgenommen, die den fachpraktischen Unterricht durchführen.

(7) Die Kosten für die fachpraktische Ausbildung an 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Personalausgaben, Materialkosten sowie sächliche Verwaltungsausgaben und Abschreibungen) sind diesen Bildungseinrichtungen entsprechend § 7 Abs. 5 zu erstatten.

(8) Werden einjährige Bildungsgänge an anderen Bildungseinrichtungen (z. B. Fachschulen) durchgeführt, erfolgt die Finanzierung analog dieser Grundsätze.

#### § 8

##### Geltungsfrist

Diese Anordnung gilt für das ab 1. September 1990 beginnende Lehr- und Ausbildungsjahr. Sie tritt mit dem Ende des Lehr- und Ausbildungsjahres oder mit Erlaß entsprechender Schulgesetze durch die Länder außer Kraft.

#### § 9

##### Inkraftsetzen

Diese An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14. August 1990

**D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Prof. Dr. Hans Joachim Meyer

#### Anlage

zu vorstehender Anordnung

**Berufsfelder für die Ausbildung im Berufsvorbereitungsjahr,  
im Berufsgrundbildungsjahr und in der Einjährigen Berufsfachschule**

- 1 Wirtschaft und Verwaltung
- 2 Metalltechnik

- 3 Elektrotechnik
- 4 Bautechnik
- 5 Holztechnik
- 6 Textiltechnik und Bekleidung
- 7 Chemie, Physik und Biologie
- 8 Drucktechnik
- 9 Farbtechnik und Raumgestaltung
- 10 Gesundheit
- 11 Körperpflege
- 12 Ernährung und Hauswirtschaft
- 13 Agrarwirtschaft

#### Anordnung

##### über die Aufhebung von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s Bauwesens

vom 7. August 1990

#### § 1

Folgende Rechtsvorschriften werden aufgehoben:

- Anordnung vom 1. August 1974 über die Berechnung, Erstattung und Finanzierung von normierten durch ungenügende Investitionsvorbereitung entstehenden Mehrkosten im komplexen Wohnungsbau (GBl. I Nr. 43 S. 399),
- Anordnung vom 22. Juni 1982 über Flächenbedarfsnormative für Investitionen der Industrie und Lagerwirtschaft (GBl. I Nr. 28 S. 529),
- Anordnung vom 7. Dezember 1982 über die Anwendung von Zeitaufwandsnormativen für Investitionen – Bauzeitnormative – (GBl. I Nr. 41 S. 654),
- Anordnung Nr. 2 vom 13. Januar 1984 über die Anwendung von Zeitaufwandsnormativen für Investitionen – Bauzeitnormative – (GBl. I Nr. 2 S. 14),
- Anordnung Nr. 3 vom 3. September 1984 über die Anwendung von Zeitaufwandsnormativen für Investitionen – Bauzeitnormative – (GBl. I Nr. 28 S. 321),
- Anordnung vom 9. September 1985 über die weitere Durchsetzung der rationellen Energieanwendung in Anlagen der technischen Gebäudeausrüstung (GBl. I Nr. 26 S. 294),
- Anordnung Nr. 4 vom 15. April 1986 über die Anwendung von Zeitaufwandsnormativen für Investitionen – Bauzeitnormative – (GBl. I Nr. 17 S. 271),
- Anordnung Nr. 5 vom 12. September 1986 über die Anwendung von Zeitaufwandsnormativen für Investitionen – Bauzeitnormative – (GBl. I Nr. 29 S. 404),
- Anordnung Nr. 6 vom 27. Oktober 1989 über die Anwendung von Zeitaufwandsnormativen für Investitionen – Bauzeitnormative – (GBl. I Nr. 22 S. 247),
- Anordnung vom 4. Dezember 1989 über die Zulassung von Sachverständigen für Anlagen der technischen Gebäudeausrüstung in nebenberuflicher Tätigkeit – Zulassungsanordnung Sachverständige TGA – (GBl. I 1990 Nr. 5 S. 28).

#### § 2

Diese An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Berlin, den 7. August 1990

**Der Minister für Bauwesen,  
Städtebau und Wohnungswirtschaft**  
Dr.-Ing. A. Viehweger



문서 번호 17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

1990 년 9 월

담당자 / 기관: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에 설치된 정치교육프로젝트그룹이 통일직전에 작성 제출한 권고안이다. 이 프로젝트그룹에는 동독과 서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 시간의 수업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교육학자 담당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을 구성해서 각 연방주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동독지역의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앞으로는 사회과 교사의 교육은 사회과학, 전문적인 교수방법론 및 교육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학위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교직과정이 현재 동독의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독지역 대학들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한다.

출처: Gagel, Walter (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oder zu kombinieren und entsprechende Arbeitsprogramme festzulegen.

Besondere Anforderungen stellt der Grundkurs „Lebensweise / Lebensgestaltung“ an die schöpferische inhaltliche und methodisch-organisatorische Gestaltung. Der Lehrer sollte zusammen mit den Schülern entscheiden, wann im Verlaufe

der beiden Schuljahre die einzelnen Themen und Problemstellungen behandelt und wie sie mit dem anderen Grundkurs („Die Bürger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sordnung“) kombiniert werden können. Auf Zensurierung sollte bei Behandlung dieser Thematik verzichtet werden. [...]

### **(M7) Empfehlungen der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September 1990**

Mit diesen „Empfehlungen“ gedachte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DDR kurz vor seiner Auflösung, der künftigen Lehrplanarb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Fundament zu geben. Zu der Projektgruppe gehörten Mitglieder aus der DDR und aus der Bundesrepublik. Von ihnen waren einige Mitglieder der Initiative „Berliner Arbeitskreis Politische Bildung“, die ihre Arbeitsergebnisse in die Beratungen eingebracht haben. – Der Abschnitt 1, in welchem die Projektgruppe aufgelistet wurde, wird hier nicht wiedergegeben. Im übrigen ist der Text bis auf den ausführlichen „Anhang“ vollständig. Die Verweise auf den Anhang sind getilgt.

#### **2. Allgemeine Empfehlungen zum politischen Unterricht**

Die vordem genannte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hat im August und September 1990 im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Ludwigsfelde getagt und folgende Empfehlungen für den politischen Unterrich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arbeitet:

Eine offene demokratische Gesellschaft ist nur lebensfähig, wenn sie von Bürgern getragen wird, die informiert, urteils- und handlungsfähig sind.

Gerade in der aktuellen Situation der ehemaligen DDR, die vor dem Aufbau eines demokratischen Gemeinwesens steht, ist es entscheidend, daß die politische Bildung als „Demokratie und Politik lernen“ in den Schulen verankert wird.

Es genügt nicht, politische Bildung nur als Unterrichtsprinzip zu realisieren und auch nicht, es den Unterrichtsgegenständen anderer Fächer zuzuweisen.

Politische Bildung hat unverwechselbare eigene Inhalte. Aus diesem Grunde wird ein eigenes Unterrichtsfach in allen Schulformen als notwendig erachtet.

Mindestens für die Klassen 7 bis 12 sind zwei Wochenstunden vorzusehen.

Die gegenwärtig vorliegenden „Rahmenpläne für Gesellschaftskunde (Erprobungslehrplan)“ bieten eine Reihe von Ansätzen, demokratische

politische Bildung in den Schulen der neuen Bundesländer aufzubauen.

Den Erfordernissen eines demokratischen politischen Unterrichts werden sie jedoch nicht gerecht; es fehlt die eindeutige Ausrichtung auf politische Inhalte und die Hinführung auf das Verständnis des Politis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uß sofort mit der Lehrplanarbeit begonnen werden. Dazu sollten Projektgruppen gebildet werden, in denen Fachwissenschaftler, Fachdidaktiker und Fachlehrer gemeinsam mit Experten für die Richtlinienarbeit der bisherigen Bundesländer zusammenwirken. Ziel dieser Tätigkeit ist längerfristig die Entwicklung von Rahmenlehrplänen. Kurzfristig sind Konzepte für das Schuljahr 1991/92 notwendig.

Gegenwärtig ist es dringend erforderlich, Angebote für Aus- und Weiterbildung der in diesem Fach unterrichtenden LehrerInnen zu entwickeln. Die Ausbildung sollte ein sozialwissenschaftliches, politikdidaktisches und erziehungswissenschaftliches Studium in Verbindung mit dem Erwerb der Lehrbefähigung für das Fach enthalten. Bei der Erstellung von Rahmenlehrplänen, der Entwicklung von Unterrichtsmaterialien, der Gestaltung des Unterrichts sowie der Aus- und Wei-

terbildung sollten die spezifischen Erfahrungen und Befindlichkeiten von SchülerInnen und LehrerInnen berücksichtigt werden.

Um die Rahmenlehrplanarb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unterstützen, haben die Teilnehmer der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Standpunkte zu folgenden Problemen entwickelt:

- Verfahren der Rahmenplanerstellung
- Verbindlichkeit und Flexibilität künftiger Rahmenpläne
- Politikverständnis in Rahmenplänen
- Ziele des politischen Unterrichts
- Kriterien der Auswahl von Inhalten
- Methoden, Sozial- und Kommunikationsformen

Bei ihren Empfehlungen geht die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von der Akzeptanz der Er-

### 2.1 Zum Verfahren der Rahmenplanerstellung

Erstellung und Revision von Rahmenplänen müssen nach einem regelten, transparenten Verfahren erfolgen, das eine Diskussion in der sachverständigen Öffentlichkeit und insbesondere eine Mitwirkung der betroffenen LehrerInnen, SchülerInnen und Eltern sowie der FachwissenschaftlerInnen und FachdidaktikerInnen an der Entscheidungsvorbereitung ermöglicht. In einer gesellschaftlichen Umbruchsituation gilt dies für Lehrpläne zur politischen Bildung in besonderem Maße. Trotz der gebotenen Eile und sicher notwendiger Kompromisse sind Transparenz und Partizipation des Prozesses zu sichern.

### 2.2 Zum Verhältnis von Verbindlichkeit und Flexibilität künftiger Rahmenpläne

Künftige Lehrpläne sind als Rahmenpläne zu entwickeln. Sie stellen eine Synthese von verbindlichen Grundaussagen und Freiräumen für die eigenständige Arbeit von LehrerInnen und SchülerInnen dar. Die Kompliziertheit der Aufgabe wird durch das Wechselverhältnis von verbindlichen und flexiblen Zielen und Inhalten des politischen Unterrichts bestimmt.

Die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empfiehlt, in den Rahmenplänen die Freiheit der LehrerInnen bei der Gestaltung des Unterrichts zu berücksichtigen, verbindliche Ziele präzise und knapp zu fassen, Inhalte nach Lernfeldern,

gebnisse der Beutelsbacher Arbeitstagung „Das Kern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 aus: „Überwältigungsverbot“: Es ist nicht erlaubt, den Schüler – mit welchen Mitteln auch immer – im Sinne erwünschter Meinungen zu überrumpeln und damit an der Gewinnung eines selbständigen Urteils zu hindern. Hier genau verläuft nämlich die Grenze zwischen Politischer Bildung und Indoktrination ...

Was in Wissenschaft und Politik kontrovers ist, muß auch im Unterricht kontrovers erscheinen ...

Der Schüler muß in die Lage versetzt werden, eine politische Situation und seine Interessenlage zu analysieren sowie nach Mitteln und Wegen zu suchen, die vorgefundene politische Lage im Sinne seiner Interessen zu beeinflussen ...“

(*Schiele/Schneider*, Stuttgart 1977, S.173ff.)

nach verbindlichen Themen- und Wahlthemen zu differenzieren.

### 2.3 Zum Politikverständnis in Rahmenplänen

In einer demokratischen und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die unterschiedliche, untereinander konkurrierende Interessen und Werte zuläßt, existieren entsprechend unterschiedliche Politikbegriffe, die ihrerseits wieder Gegenstand gesellschaftlicher und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en sind. Politikbegriffe sind sowohl historisch als auch gesellschaftlich vermittelt und unterliegen somit Veränderungen. Deshalb dürfen Rahmenpläne nicht versuchen, einen „richtigen“ Politikbegriff zu definieren. Zugrunde gelegt werden sollte ein Verständnis von Politik, das sich über „Dimensionen des Politischen“ bestimmt. Dimensionen des Politischen helfen, die Komplexität der politischen Wirklichkeit einzufangen, ohne sie vor schnell auf bestimmte Aspekte zu verengen.

### 2.4 Zu den Zielen des politischen Unterrichts

Die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empfiehlt, die Diskussion zu den Zielen des Politikunterrichts auf der Grundlage von Qualifikationen und Lernzielen zu gestalten. Es sollte u.a. um solche Qualifikationen gehen, wie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 sich in gesellschaftlich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Ordnungen zu orientieren;

- die Chancen zur Einflußnahme auf gesellschaftliche Strukturen zu nutzen und zu erweitern;
- in politischen Alternativen zu denken und Entscheidungen nach demokratischen Regeln zu verwirklichen;
- eigene Interessen und die anderer zu erkennen und zu akzeptieren;
- das Lebensrecht und die Eigenständigkeit anderer Gesellschaften anzuerkennen, für eine gerechte Friedensordnung und für die Interessen benachteiligter Völker einzutreten;
- sowohl durch eigenes Verhalten als auch durch Beteiligung an gesellschaftlichen Initiativen, Verantwortung für die Sicherung der Lebensbedingungen in der Zukunft mitzuübernehmen.

### 2.5 Zu den Kriterien der Auswahl von Inhalten

Im Mittelpunkt des Unterrichts stehen Politikfelder. Zugänge dafür sind über Schlüsselprobleme herzustellen, die für das Überleben der Menschen und ein menschenwürdiges Zusammenleben sowie die Verbesserung der Lebensqualität existentiell wichtig, allgemein-bedeutsam und repräsentativ im Sinne der Herausforderungen für gesellschaftliche Gestaltungsaufgaben sind.

Wichtige Aspekte sind u.a. das Aufgreifen von Problemen „permanenter Aktualität“ und die Auswahl nach jetziger und künftiger Bedeutsamkeit für die Lernenden. Aus dieser Sicht verdichten sich bestimmte Probleme zu möglichen Inhalten des Unterrichts.

Für einen handlungsorientierten Politikunterricht stellen Schülerinteressen mehr dar als nur ein Auswahlkriterium für Lernziele und Lerninhalte, sie erfordern eine bewußte Entscheidung für einen schülerzentrierten Unterricht. Aber ein allein an den Interessen der SchülerInnen orientierter Unterricht führt zu einer thematischen Verengung des politischen Bildungsauftrages der Schule.

Der Interessenbegriff muß in diesem Sinne immer auch auf die Interessen anderer und das soziale Ganze bezogen sein. Die Kriterien „Betroffenheit“ und „Bedeutsamkeit“ müssen bei der Inhaltsfindung ausreichend berücksichtigt werden. Die Bezugnahme auf Betroffenheit oder Bedeutsamkeit in der Unterrichtspraxis stellt zugleich die thematische Trennlinie zwischen

bloßer „Lebenskunde“ und einem an „Politik“ orientierten Unterricht dar.

### 2.6 Zu Methoden, Sozial- und Kommunikationsformen

Untersuchungen zum Methodengebrauch zeigen eine deutliche Kluft zwischen Anspruch und Wirklichkeit. Aufgrund des wechselseitigen Abhängigkeitsverhältnisses zwischen Ziel, Inhalt und Methode gewinnen Methoden- und Medienentscheidungen erheblich an Bedeutung.

Die Projektgruppe „Politische Bildung“ empfiehlt in zukünftigen Rahmenplänen zu berücksichtigen:

- die Zielvorstellung der Erziehung zur Demokratie, zum mündigen Bürger, kann nur durch einen demokratischen Unterrichtsstil eingelöst werden.
- Methoden der politischen Bildung wie z.B. die Gruppenarbeit, das Rollenspiel, das Planspiel, das Projekt etc. sind selbst Lernziele des Unterrichts.
- die SchülerInnen sollen am Ende der 10.Klasse mindestens einmal die wesentlichsten Methoden kennengelernt und praktiziert haben, bei freier Entscheidung über Zeit und Thema.

### 2.7 Zur Aus- und Weiterbildung

Die künftige Ausbildung von Gesellschaftskundelehrern sollte als ein integriertes Studium von Sozialwissenschaften, Fachdidaktik, Erziehungswissenschaften und unterrichtspraktischen Übungen gestaltet werden. Innerhalb des fachwissenschaftlichen Studienanteils stellt die Politikwissenschaft den Hauptbestandteil dar.

Um den akuten Bedarf an qualifizierten Gesellschaftskundelehrern sicherzustellen, sollten kurzfristig fachwissenschaftliche, fachdidaktische und unterrichtspraktische Fortbildungsveranstaltungen angeboten werden. Mittelfristig sollten sie so aufeinander abgestimmt sein, daß sie zu einem Abschluß führen.

Da ein solch komplexes Lehrangebot zur Zeit durch die 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icht bereitgestellt werden kann, ist eine umfangreiche Kooperation mit Hochschuleinrichtungen der bisherigen Bundesländer angeraten.



문서 번호 18

일반교육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 - 임시 학교령

1990 년 9 월 18 일

담당자 / 기관: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동독정부가 통일 직전에 발표한 학교령이다. 그 목적은 동독지역의 학교제도를 서독의 학교체계와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지닌 과제와 목표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공립학교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Kommune)가 된다. 학교제도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학교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Schulversuch)을 도모하거나, 혹은 특별한 실험학교(Versuchsschule)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지원센터(Jugendhilfe) 및 특수학교, 자문단체 및 보건의료소 등의 기관들과 학교 간의 협력방식도 새로이 규정된다.

출처: Gesetzblatt Teil I Nr. 63 - Ausgabetag: 26. September 1990



die Elternbeiträge nicht zugemutet werden kann, sind die Elternbeiträge auf Antrag teilweise oder gänzlich zu erlassen oder zu übernehmen.

## § 18

**Übergangsbestimmung**

Die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vom 9. August 1990 zur Verordnung über das Errichten und Betreiben von 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 in freier Trägerschaft (GBL I Nr. 60 S. 1470) bleibt mit der inhaltlichen Orientierung auf diese Verordnung bis zum Erlass entsprechender landesrechtlicher Regelungen in Kraft.

## § 19

**Inkrafttreten**

(1) Diese Ver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Gleichzeitig treten außer Kraft:

- die Verordnung über Kindereinrichtungen der Vorschulerziehung vom 22. April 1976 (GBL I Nr. 14 S. 201)
- die Verordnung über das Errichten und Betreiben von 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 in freier Trägerschaft vom 27. Juni 1990 (GBL I Nr. 41 S. 620), da ihre Inhalte in dieser Verordnung enthalten sind.

(3) Die zur Durchführung dieser Verordnung erforderlichen Bestimmungen werden durch die zuständigen Minister des Landes erlassen.

(4) Diese Verordnung gilt als Landesrecht bis zum Erlass anderweitiger landesgesetzlicher Regelungen.

Berlin, den 18. September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Prof. Dr. Hans Joachim Mey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r. Schmidt

Minister für Familie und Frauen

**Verordnung  
über die Betreuung von Kindern in Tagespflege  
vom 18. September 1990**

## § 1

(1) Wenn es für das Wohl und die Förderung eines Kindes erforderlich ist und ein entsprechender Wunsch der Erziehungsberechtigten besteht, kann dieses Kind für einen Teil des Tages oder ganztags durch eine Tagespflegeperson betreut werden. Diese Tagespflege kann im Haushalt der Tagespflegeperson oder im Haushalt der Erziehungsberechtigten erfolgen.

(2) Die Länder haben dafür Sorge zu tragen, daß in den Kommunen für diese Bedarfsfälle die personellen und finanziellen Voraussetzungen zur Tagespflege geschaffen, erhalten und ausgebaut werden.

(3) Die Bestimmungen dieser Verordnung sind nur auf die Leistungen der Tagespflege anzuwenden, die durch das zuständige Jugendamt vermittelt oder angeboten werden.

## § 2

(1) Die Tagespflegeperson muß für die Betreuung eines Kindes geeignet sein und über die notwendig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zur Betreuung und Erziehung von Kindern verfügen. Sie bedarf zur Ausübung ihrer Tätigkeit einer Erlaubnis durch das zuständige Jugendamt, soweit sie die Tätigkeit der Tagespflege gewerbsmäßig betreibt.

(2) Zusammenschlüsse von Tagespflegepersonen können durch das Jugendamt unterstützt und beraten werden.

(3) Tagespflegepersonen und Erziehungsberechtigte arbeiten zum Wohl des Kindes zusammen. Sie haben Anspruch auf Beratung in allen Fragen der Tagespflege durch das zuständige Jugendamt.

## § 3

- (1) Die Tagespflegeperson übernimmt die Tagespflege
- auf der Grundlage einer vertraglichen Vereinbarung mit dem/dem/der Erziehungsberechtigten
  - oder
  - aufgrund einer Beauftragung durch das zuständige Jugendamt mit Zustimmung der/des Erziehungsberechtigten.
- Rechte und Pflichten, die sich daraus ergeben, sind vertraglich zu vereinbaren.

(2) In den vertraglichen Vereinbarungen ist zu regeln:

- die Erstattung der Aufwendungen, die bei der Tagespflege entstehen,
- die Vergütung der Erziehungsleistung,
- der notwendige Abschluß einer Unfall- und Haftpflichtversicherung für Schäd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Tagespflege eintreten.

Weitere notwendige Vereinbarungen sollen in den Vertrag aufgenommen werden.

## § 4

Wird die Tagespflege mit dem Jugendamt vertraglich vereinbart und hat das Jugendamt die Erstattung der Aufwendungen und die Vergütung der Erziehungsleistung übernommen, haben die Erziehungsberechtigten an das Jugendamt einen ihrem Einkommen angemessenen Beitrag zum Ersatz dieser Kosten zu leisten.

## § 5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 dieser Verordnung erläßt das Ministerium für Familie und Frauen; nach Bildung der Länder können diese — entsprechend § 6 (2) dieser Verordnung — die entsprechenden Landesministerien erlassen.

## § 6

(1) Diese Ver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Diese Verordnung gilt nach der Bildung der Länder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als Landesrecht weiter, bis sie durch eine neue landesrechtliche Regelung abgelöst wird.

Berlin, den 18. September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Minister für Familie und Frauen  
I. V. Dr. Hans Geißler  
Staatssekretär

**Verordnung  
über Grundsätze und Regelungen  
für allgemeinbildende Schulen und berufsbildende Schulen  
— Vorläufige Schulordnung —  
vom 18. September 1990**

## § 1

(1) Diese Verordnung gilt für das Schulwes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sowie in dem Teil von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der BRD bisher nicht galt, bis zum

Inkrafttreten landesrechtlicher Regelungen. Sie gilt für die öffentlichen Schulen, die Schulträger, die an den Schulen tätigen Pädagogen, die Schüler und Auszubildenden an öffentlichen Schulen (nachfolgend Schüler genannt) und die Mütter, Väter sowie anderen Erziehungsberechtigten (nachfolgend Eltern genannt), deren Kinder eine öffentliche Schule besuchen.

(2) Öffentliche Schulen im Sinne dieser Verordnung sind:

- allgemeinbildende Schulen mit den Klassenstufen 1 bis 10
- allgemeinbildende Schulen, die zum Abitur führen
- Sonderschulen
- Spezialschulen
- polytechnische Einrichtungen
- berufsbildende Schulen

deren Träger die Kommunen oder die Länder sind.

(3) Für berufsbildende Schulen gilt diese Verordnung nur insoweit, wie im Gesetz über Berufsschulen vom 19. Juli 1990 (GBl. I Nr. 50 S. 919) keine entsprechenden Regelungen getroffen worden sind.

(4) Für Schulen in freier Trägerschaft gilt das Verfassungsgesetz über Schulen in freier Trägerschaft vom 22. Juli 1990 (GBl. I Nr. 52 S. 1036).

## I.

### § 2

#### Recht auf schulische Bildung

Die Schule gewährleistet die Wahrnehmung des Rechts auf schulische Bildung für alle Kinder und Jugendlichen. Sie achtet und fördert die Individualität der Kinder und Jugendlichen und unterstützt sie bei der Vorbereitung auf Schullaufbahnentscheidungen und Berufswahl. Die Schule respektiert das Erstrecht der Eltern auf Erziehung ihrer Kinder.

### § 3

#### Abiturbildung

(1) Ziel der Abiturbildung ist es, eine allgemeine bzw. fachgebundene Hochschulreife zu vermitteln.

(2) Die Hochschulreife kann an bzw. in erweiterten Oberschulen, Abiturklassen der Berufsbildung, Spezialschulen und Spezialklassen, Vorkursen bzw. Kollegs der 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sowie in vergleichbaren 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erworben werden.

(3) Die Einrichtungen der Abiturbildung stehen jedem offen, der über die erforderlichen Leistungsvoraussetzungen verfügt.

(4) Das Abitur wird nach einheitlichen Grundsätzen und Anforderungen abgelegt.

### § 4

#### Sonderschulen

(1) Sonderschulen gewährleisten die Bildung und Individualentwicklung von Kindern mit Behinderungen. Sie erfassen in entsprechenden Einrichtungen Schwerhörige und Gehörlose, Sehschwache und Blinde, Sprachgestörte, Lernbehinderte, Geistigbehinderte, dauernd Körperbehinderte, wesentlich Verhaltensgestörte sowie zeitweilig stationär behandlungsbedürftige Kinder und Jugendliche.

(2) Die Sonderschulen ermöglichen bei Beachtung von Art und Schweregrad der Behinderung den Übergang von Kindern aus einer Sonderschule in eine andere Schule.

(3) Die Sonderschulen und die Beratungsstellen für pädagogische Rehabilitation sichern in Zusammenarbeit mit dem Gesundheitswesen die Früherfassung,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behinderter oder von Behinderung bedrohter Kinder sowie die fachkompetente Beratung von Eltern zur Erziehung ihres behinderten Kindes in der Familie sowie von Pädagogen zur Realisierung integrativer Bildungsmaßnahmen.

### § 5

#### Erfüllung der Schulpflicht

(1) Dem Recht auf schulische Bildung entspricht die allgemeine zehnjährige Schulpflicht (Vollzeitschulpflicht). Die Schulpflicht, die in der Regel mit dem vollendeten 6. Lebensjahr beginnt, wird nach dem Willen der Eltern an allgemeinbildenden Schulen erfüllt. Das kann sowohl an öffentlichen Schulen als auch an Schulen in freier Trägerschaft erfolgen. In Ausnahmefällen kann die Vollzeitschulpflicht an berufsbildenden Schulen beendet werden. Eine Erfüllung der Vollzeitschulpflicht in der Fortbildung ist nicht möglich.

(2) Schulpflichtige mit physisch-psychischen Behinderungen erfüllen ihre Schulpflicht bei Vorhandensein notwendiger Bedingungen im Rahmen der integrativen Bildung an einer allgemeinbildenden Schule bzw. in einer Sonderschule. Die Sonderschulen könn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Eltern behinderten Kindern im Interesse ihrer Individualentwicklung und Lebensvorbereitung einen über die Vollzeitschulpflicht hinausgehenden Schulbesuch ermöglichen.

(3) Für den Besuch öffentlicher Schulen besteht Schulgeldfreiheit.

### § 6

#### Unterricht und obligatorische Schulveranstaltungen

(1) Grundlage für den Unterricht bilden die für die Schule geltenden Rahmenstundentafeln sowie die von der obersten Schulaufsichtsbehörde bestätigten Lehr- bzw. Rahmenpläne und Rahmenprogramme.

(2) Der Unterricht wird nach Jahrgangsstufen in Klassen, Kursen oder Gruppen erteilt, für deren Bildung die oberste Schulaufsichtsbehörde Richtlinien erläßt. Kurse können auch jahrgangsübergreifend durchgeführt werden.

(3) Für den Unterricht vorgesehene Schulbücher bedürfen der Genehmigung durch die oberste Schulaufsichtsbehörde. Über den Einsatz genehmigter Schulbücher an der jeweiligen Schule entscheidet nach Konsultation mit der Schulkonferenz die Fachkonferenz. Das kann auch weitere im Unterricht verwendete Lehr- und Lernmittel betreffen.

(4) Die Verteilung des obligatorischen, wahlweise obligatorischen und fakultativen Unterrichts auf die Unterrichtstage regelt der Stundenplan. Beginn und Dauer der täglichen Unterrichtszeit sowie alle weiteren Festlegungen zum Unterricht aus pädagogisch-hygienischer und materiell-hygienischer Sicht werden auf der Grundlage von Rechtsvorschriften an der Schule geregelt.

(5) Zur Ergänzung der Unterrichts- und Erziehungsarbeit werden obligatorische Schulveranstaltungen durchgeführt. Dazu gehören Wandertage und Exkursionen.

(6) Weitere obligatorische Schulveranstaltungen können durch die Schulkonferenz vorgeschlagen und durch den Direktor nach Anhörung der Lehrerkonferenz festgelegt werden.

### § 7

#### Bewertung, Versetzung und Prüfung

(1) Die von den Schülern im Unterricht erbrachten Leistungen werden von dem jeweiligen Fachlehrer verbal bzw. durch Zensuren bewertet und zum Halbjahr sowie zum Ende eines Schul- bzw. Lehrjahres (nachfolgend Schuljahr genannt) als Gesamtleistung ausgewiesen.

(2) Schüler, die während des laufenden Schuljahres die erforderlichen Leistungen erbracht haben, werden in die nächsthöhere Jahrgangsstufe versetzt. Wurden die erforderlichen Leistungen nicht erreicht, kann die bisher besuchte Jahrgangsstufe in der Regel wiederholt werden. An Hilfsschulen sowie Schulen für Geistigbehinderte steigen die Schüler in der Regel mit ihrer Klasse in die nächsthöhere Klassenstufe auf.

<sup>1</sup> Z. Z. gilt die Verordnung vom 25. Januar 1990 über die 5-Tage-Unterrichtswoche an den allgemeinbildenden und berufsbildenden Schulen (GBl. I Nr. 5 S. 23).



(3) In den Abschlußklassen werden Prüfungen durchgeführt.

(4) Bewertung, Versetzung und Prüfungen erfolgen auf der Grundlage geltender Regelungen.

#### § 8

##### Außerunterrichtlicher Bereich

(1) Mit ihrem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 trägt die Schule im Zusammenwirken mit den Schülern, den Eltern und der Öffentlichkeit zur Freizeitgestaltung der Schüler bei.

(2) Über Inhalt, Form und Umfang des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es wird an der Schule selbst entschieden. Entsprechend den Interessen, Neigungen und Begabungen der Schüler unterbreitet die Schule Angebote zur freiwilligen Teilnahme an verschiedenen Projekten außerhalb des Unterrichts und gibt Anregungen sowie Hinweise zur individuellen Freizeitgestaltung. Die Schulträger unterstützen den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 entsprechend ihren finanziellen Möglichkeiten.

(3) Der Schulhort als Bestandteil der Schule bietet den Kindern vor allem der Klassen 1 bis 4 (bzw. bis 5 an Sonderschulen), deren Eltern es wünschen, eine altersgemäße und interessenorientierte Freizeitgestaltung. Die Arbeit im Schulhort wird auf der Grundlage geltender Regelungen und in Absprache mit den Eltern gestaltet. Das gilt analog auch für die differenzierten Freizeitgruppen der Kinder der Klassen 5 bis 8 an Sonderschulen.

(4) Gehört zur Schule ein Internat, so sind das Leben und die Arbeit im Internat auf der Grundlage geltender Regelungen und in Absprache mit den Eltern bzw. in Abhängigkeit von Alter und Reife der Internatsbewohner unter ihrer Mitwirkung zu gestalten.

#### § 9

##### Schulversuche und Versuchsschulen

(1) Für die Weiterentwicklung des Schulwesens können Schulversuche im Rahmen bestehender Schularten durchgeführt oder besondere Versuchsschulen geschaffen werden.

~~(2) Die Durchführung von Schulversuchen und die Errichtung von Versuchsschulen bzw. die Umwandlung bestehender Schulen in Versuchsschulen bedürfen der Zustimmung der Schulkonferenz und der Genehmigung durch die oberste Schulaufsichtsbehörde.~~

(3) Die beteiligten Schüler und deren Eltern sind über Ziel, Inhalt und Methoden der Schulversuche umfassend zu informieren. Die Durchführung von Schulversuchen setzt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beteiligten Eltern und der Elternvertretung der Schule voraus.

(4) Der Besuch von Versuchsschulen ist freiwillig. Bei vorzeitiger Aufhebung einer Versuchsschule bzw. vorzeitigem Abgang eines Schülers von einer solchen Schule auf Antrag der Eltern hat die zuständige Schulaufsichtsbehörde für geeignete Übergänge bzw. für die Fortführung des Bildungsganges und für einen gleichwertigen Abschluß Sorge zu tragen.

#### II.

#### § 10

##### Schule und Schulträger

(1) Die Kommunen<sup>2</sup> sind als Träger öffentlicher Schulen berechtigt und verpflichtet, in eigener Verantwortung und Zuständigkeit nach Maßgabe dieser Verordnung und anderer Rechtsvorschriften sowie im Einvernehmen mit der obersten Schulaufsichtsbehörde allgemeinbildende Schulen zu errichten, zu verwalten und zu bewirtschaften. Sie können nach der gleichen Maßgabe Schulen übernehmen und erweitern sowie in begründeten Fällen einschränken oder auflösen.

<sup>2</sup> Z. Z. gilt das 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Kommunalverfassung) (GBl. I Nr. 28 S. 255).

(2) In besonderen Fällen können auch die Länder Träger öffentlicher Schulen sein.

(3) Die Kosten für die Errichtung, Verwaltung, Bewirtschaftung und den Betrieb einer öffentlichen Schule sowie die Kosten für das technische Personal obliegen dem Schulträger.

(4) Die Schule wendet sich in materiell-technischen, finanziellen, verwaltungstechnischen Schulangelegenheiten sowie in dienstlichen Angelegenheiten des technischen Personals an den Schulträger. Er verständigt sich über die in eigener Kompetenz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mit der Schule und der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5) Die Schule erhält vom Schulträger jährlich einen Betrag an Haushaltsmitteln, über deren Verwendung der Direktor im Zusammenwirken mit der Schulkonferenz entscheidet.

(6) Schule und Schulträger sind verpflichtet, von der obersten Schulaufsichtsbehörde gestellte Mindestanforderungen zur Ausgestaltung von Schulgebäuden und -grundstücken, für die Ausstattung der Schule und hinsichtlich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Unterrichts- und Erziehungsarbeit zu erfüllen.

(7) Träger von polytechnischen Einrichtungen sind die Kommunen, Betriebe und Unternehmen oder Kammern und Verbände. Näheres wird in Rechtsvorschriften geregelt.<sup>3</sup>

#### § 11

##### Schule und Öffentlichkeit

(1) Der Direktor der Schule kann sich in Übereinstimmung mit dem Schulträger und der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an die Öffentlichkeit wenden und sie um Unterstützung in schulischen Angelegenheiten, bei der Erfüllung der Unterrichts- und Erziehungsaufgaben ersuchen. Er trägt als Leiter der Einrichtung die Verantwortung für die Zusammenarbeit der Schule mit der Öffentlichkeit.

(2) Öffentlichkeit im Sinne dieser Verordnung sind juristische Personen wie Unternehmen, Betriebe, Kammern, Verbände, Vereinigungen, Organisationen, Parlamente und Kirchen sowie natürli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Lebens ~~und außerhalb der Schule tätige Freizeitpädagogen, Schulpsychologen und Sozialarbeiter der Jugendhilfe.~~

(3) Die Schule dient nach Maßgabe des § 15 Abs. 4 dieser Verordnung der Öffentlichkeit als ein kulturelles Zentrum, als Stätte musischer und sportlicher Aktivitäten.

#### § 12

##### Zusammenarbeit der Schule mit der Jugendhilfe, mit Einrichtungen des Sonderschulwesens, mit Beratungsstellen und dem Gesundheitswesen

(1) Die Schule kann die Jugendhilfe um Unterstützung ersuchen, sofern grundlegende Rechte und Bedürfnisse von Minderjährigen durch deren Eltern mißachtet oder aus anderen Gründen ungenügend gewahrt werden und deshalb eine ernsthafte Beeinträchtigung ihrer Entwicklung eingetreten oder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zu erwarten ist.

(2) Die Schule kann sich an Familien- und Jugendberatungsstellen, Einrichtungen des Sonderschulwesens (speziell an Beratungsstellen für pädagogische Rehabilitation) sowie Initiativ- und Selbsthilfegruppen wenden, die zur Beratung von Pädagogen, Schülern und Eltern zu Erziehungs- und Entwicklungsproblemen der Kinder und Jugendlichen, zu Suchtproblemen sowie zur AIDS-Prävention zur Verfügung stehen.

(3) Die Schule trägt in Zusammenarbeit mit den zuständigen Stellen des Gesundheits- sowie Sozialwesens auf der Grundlage der gültigen rechtlichen Regelungen zur Gesunderhaltung und Gesundheitsförderung der Schüler bei.

<sup>3</sup> Z. Z. gilt die Verordnung vom 6. Juni 1990 über die Aufrechterhaltung von Leistungen betrieblicher Kindergärten, polytechnischer und berufsbildender Einrichtungen (GBl. I Nr. 32 S. 297).

(4) Die Schulen werden von der Jugendhilfe sowie den Familien- und Jugendberatungsstellen gemäß geltendem Recht bei der Arbeit zur Erfüllung ihrer Unterrichts- und Erziehungsaufgaben bzw. bei der Zusammenarbeit mit den Eltern unterstützt.

### III.

#### § 13

##### Leitung der Schule

(1) Die Schule wird unter Mitwirkung aller an Unterricht und Erziehung Beteiligten vom Direktor geleitet.

(2) Für spezielle Leitungsaufgaben werden ein oder mehrere stellvertretende Direktoren eingesetzt.

(3) Die Ernennung des Direktors und der stellvertretenden Direktoren erfolgt gemäß geltender Rechtsvorschriften.<sup>4</sup>

(4) Gehören zu einer Schule Hort, Internat, Vorschulteil, so kann ein Hortleiter, Internatsleiter, Leiter des Vorschulteils eingesetzt werden.

#### § 14

##### Direktor

(1) Der Direktor ist für alle schulischen Angelegenheiten zuständig, sofern keine anderweitigen Kompetenzen seitens der Schulaufsichtsbehörde, des Schulträgers, der Kommune und der Mitwirkungsgremien vorliegen. Er vertritt die Schule nach außen.

(2) Der Direktor ist Dienstvorgesetzter der an der Schule tätigen Pädagogen, pädagogischen und technischen Mitarbeiter und ihnen gegenüber weisungsbefugt.

(3) Der Direktor ist gemeinsam mit den Pädagogen für die Durchführung und den geordneten Ablauf der Unterrichts-, Erziehungs- und Verwaltungsarbeit an der Schule — einschließlich der Arbeit im Schulhort, im Internat sowie im Vorschulteil — verantwortlich. Er stützt sich dabei auf die Mitwirkungsgremien.<sup>4</sup> In diesem Rahmen ist er insbesondere verpflichtet

- Schulkonzepte zu entwickeln, mit den zuständigen Gremien und Stellen zu beraten bzw. abzustimmen und auf ihre Verwirklichung hinzuwirken;
- sich über Ergebnisse, Bedingungen und Prozesse der Unterrichts-, Erziehungs- und Verwaltungsarbeit zu informieren, zu diesem Zweck zu hospitieren und bei Verstößen gegen geltendes Recht, gegen den ordnungsgemäßen Ablauf der schulischen Arbeit einzugreifen;
- die Pädagogen zu beraten, ohne ihren pädagogischen Freiraum unnötig oder unzumutbar einzuengen, auf ihre Fortbildung hinzuwirken und für ihre Kooperation zu sorgen sowie sie in Entscheidungsfindungen zur Unterrichts- und Erziehungsarbeit der Schule und ihrer Leitung einzubeziehen;
- die Arbeit der Eltern- und Schülervertretungen zu unterstützen sowie mit ihrem Einverständnis an Schüler- und Elternversammlungen mit beratender Stimme teilzunehmen;
- mit den an der Schule tätigen Pädagogen und Mitarbeitern, dem Schulträger und der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den Leitern und Lehrkräften von polytechnischen Einrichtungen, den Betrieben und zuständigen Stellen für die Berufsausbildung, den zuständigen Stellen der Jugendhilfe, des Gesundheits- sowie Sozialwesens, Einrichtungen des Sonderschulwesens und mit der Öffentlichkeit zusammenzuarbeiten;
- an der Schule zu unterrichten, sich für seine Lehr- und Leitungstätigkeit fortzubilden.

(4) Der Direktor bewirtschaftet die Schule mit den durch den Schulträger zugewiesenen Haushaltsmitteln. Er übt auf dem Grundstück der Schule das Hausrecht aus. Über die außerschulische Nutzung der Schulanlagen entscheidet der Direktor im Einvernehmen mit der Schulkonferenz und dem Schulträger. Der Unterricht, der außerunterrichtliche Bereich und das gesamte Leben an der Schule dürfen durch eine solche Nutzung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 § 15

##### Stellvertretende Direktoren, Hortleiter, Internatsleiter

(1) Die Aufgabenbereiche stellvertretender Direktoren, von Hort- und Internatsleitern sowie Leitern des Vorschulteils werden durch den Direktor in gemeinsamer Absprache festgelegt.

(2) Stellvertretende Direktoren, Hort- und Internatsleiter sowie Leiter des Vorschulteils sorgen selbständig im Auftrag des Direktors für eine rechtmäßige, sachgerechte Ausführung und einen ordnungsgemäßen Ablauf der Unterrichts- und Erziehungsarbeit im Rahmen ihrer speziellen Leitungsaufgaben.

#### § 16

##### Pädagogen

(1) Pädagoge im Sinne dieser Verordnung ist, wer nach entsprechender Ausbildung an einer Schule beruflich und selbständig Unterricht erteilt bzw. beruflich und selbständig Erziehungsarbeit im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 der Schule leistet, als Lehrer, Lehrkraft für produktive Arbeit, Lehrkraft für Fachpraxis bzw. Erzieher oder Freizeitpädagoge sowie als Pädagoge in Beratungsstellen für pädagogische Rehabilitation tätig ist.

(2) Das Arbeitsverhältnis der Pädagogen wird durch einen entsprechenden Vertrag mit der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begründet, geändert und gegebenenfalls beendet.

(3) Die Pädagogen sind der Verfassung, den Gesetzen,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und den übrigen für sie geltenden Vorschriften und Anordnungen sowie den Beschlüssen der Konferenzen der Pädagogen verpflichtet. Die Pädagogen gestalten in diesem Rahmen Unterricht und Erziehung in eigener pädagogischer Verantwortung. Ihr pädagogischer Freiraum darf nicht unnötig oder unzumutbar eingeengt werden.

(4) Die Pädagogen haben über dienstliche Angelegenheiten Schweigepflicht zu wahren. Diese Verpflichtung erlischt nicht mit der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5) Unbeschadet des Rechts der Pädagogen, ihre eigene Meinung im Unterricht und im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 zu äußern, sorgen sie dafür, daß auch andere Auffassungen zum Ausdruck gebracht werden können. Sie nehmen Rücksicht auf Empfindungen und Überzeugungen der an der schulischen Arbeit Beteiligten.

(6) Es gehört zu den Dienstpflichten der Pädagogen, die Unterrichts- und Erziehungsarbeit zu planen, vorzubereiten und auszuwerten, sich selbständig und eigenverantwortlich fortzubilden. Sie beraten Eltern und Schüler in Fragen der schulischen Erziehung.

(7) Die Pädagogen haben das Recht auf Mitwirkung und Mitbestimmung in den pädagogisch-inhaltlichen und organisatorischen Angelegenheiten der Schule und deren Leitung. Sie nehmen dieses Recht durch ihr Stimmrecht in den verschiedenen Mitwirkungsgremien wahr.

(8) Die Pädagogen nehmen die Fürsorge- und Aufsichtspflicht der Schule, einschließlich Sicherheitserziehung und Unfallverhütung, wahr. Sie können Schülern gegenüber Anweisungen erteilen, sofern das deren Unterrichtsarbeit und Verhalten in der Schule und im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 betrifft.

(9) Die Pädagogen informieren Schüler und Eltern über ihre Unterrichtsvorhaben bzw. über Vorhaben im außerunterricht-

<sup>4</sup> Z. Z. gilt die Verordnung vom 30. Mai 1990 über die Mitwirkungsgremien und Leitungsstrukturen im Schulwesen (GBl. I Nr. 32 S. 294).

lichen Bereich und geben ihnen Gelegenheit zu Vorschlägen und Aussprachen.

(10) Die in einer Klasse tätigen Pädagogen arbeiten mit dem Klassenlehrer zusammen, der vom Direktor mit der Führung der Klasse – in der Regel für mehrere Schuljahre – betraut wird.

(11) Der Klassenlehrer

- ist Ansprechpartner der Schüler seiner Klasse und deren Eltern in schulischen Angelegenheiten;
- führt die seine Klasse betreffenden Schuldokumente;
- arbeitet mit den Schüler- und Elternvertretern der Klasse zusammen, nimmt mit ihrem Einverständnis an Schüler- und Elternversammlungen der Klasse mit beratender Stimme teil;
- informiert den Direktor über die Entwicklung seiner Klasse;
- beruft Klassenkonferenzen ein und führt sie durch;
- kann Belobigungen aussprechen, Auszeichnungen beantragen, Erziehungs- und Ordnungsmaßnahmen für einzelne Schüler seiner Klasse vorschlagen bzw. aussprechen;
- hat in allen schulischen Gremien, in denen Probleme seiner Klasse beraten werden, die Möglichkeit zur Mitsprache bzw. zum Vortrag von Schüler- oder Klassenangelegenheiten.

#### § 17

##### Schüler

(1) Die Schüler haben das Recht und die Pflicht, nach Maßgabe dieser Verordnung bei der Erfüllung der Unterrichts- und Erziehungsaufgaben mitzuwirken und in diesem Rahmen ihre Interessen wahrzunehmen.

(2) Die Schüler nehmen ihr Recht auf Mitwirkung wahr, indem sie ihrem Alter, ihrer persönlichen Reife und ihrem Kenntnisstand entsprechend

- Schülervertretungen wählen, die sich an der Arbeit der Mitwirkungsgremien beteiligen;
- Vorschläge zur Gestaltung des Unterrichts, des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es und des gesamten Lebens an der Schule unterbreiten und sich an deren Realisierung beteiligen;
- mit eigenen Leistungen zur Ausgestaltung der Schule beitragen.

(3) Zu den Rechten der Schüler gehört, daß sie

- zu den sie betreffenden Angelegenheiten und wesentlichen Vorgängen in der Arbeit der Schule informiert und gehört werden und einen Lehrer des Vertrauens wählen können;
- Kenntnis über Beurteilungen ihrer Persönlichkeit, über Maßstäbe der Bewertung und Zensierung, über ihren Leistungsstand und Förderungsmöglichkeiten erhalten;
- ihr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äußern und verbreiten können, sofern dadurch keine Beeinträchtigung des Unterrichts und des Lebens an der Schule bzw. Mißachtung der Individualität und Würde anderer erfolgt;
- sich bei als ungerecht empfundener Behandlung oder Beurteilung an die Pädagogen, die Schülervertretungen, den Direktor und die Schulkonferenz wenden können.

(4) Zu den Pflichten der Schüler gehört,

- regelmäßig und pünktlich die Schule zu besuchen und sich am Unterricht zu beteiligen;
- durch ihr persönliches Verhalten zu einem Leben in der Gemeinschaft beizutragen, das von der Achtung der Würde und Individualität eines jeden geprägt ist;
- die materiellen Werte der Schule und das persönliche Eigentum anderer zu achten und pfleglich damit umzugehen;
- im Rahmen der schulischen Ausbildung gestellten Aufgaben nachzukommen sowie den Anordnungen der Pädagogen betreffs der Unterrichtsarbeit und ihres Verhaltens in der Schule Folge zu leisten.

(5) Die Schüler können für besondere Leistungen gemäß geltender Rechtsvorschriften und schuleigener Regelungen belobigt und ausgezeichnet werden. In begründeten Fällen können Schüler mit Erziehungs- und Ordnungsmaßnahmen bestraft werden.

(6) Gewählte Schülervertreter dürfen wegen ihrer Funktion in keiner Weise bevorzugt oder benachteiligt werden.

#### § 18

##### Eltern

(1) Eltern im Sinne dieser Verordnung sind alle Eltern, denen die Sorge für die Person des Schülers zusteht, oder andere Personen, sofern ihnen die Erziehung des Schülers anvertraut ist.

(2) Zur Wahrnehmung ihres Erziehungsrechts haben die Eltern das Recht, im Rahmen dieser Verordnung an der schulischen Arbeit zur Bildung und Erziehung ihrer Kinder mitzuwirken.

(3) Ihr Recht auf Mitwirkung nehmen die Eltern wahr durch

- Wahl von Elternvertretern (ausgenommen an berufsbildenden Schulen) und deren Teilnahme an Beratungen in den Mitwirkungsgremien;
- Informations- und Erfahrungsaustausch in Elternversammlungen, Elternsprechstunden und persönlichen Gesprächen mit den Pädagogen;
- Mitwirkung an der Gestaltung des außerunterrichtlichen Bereiches der Schule;
- freiwillige Beiträge zur Ausgestaltung des schulischen Lebens sowie des Schulgebäudes und -geländes und der Ausstattung der Schule.

(4) Die Eltern haben das Recht auf angemessene Information zu wichtigen Schulangelegenheiten und auf Beratung in allen Fragen der Entwicklung ihrer Kinder.

(5) Die Eltern haben das Recht, bei Rechtsverstößen seitens der Schule Einspruch beim Direktor bzw. bei der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zu erheben.

(6) Die Eltern wirken in Zusammenarbeit mit der Schule darauf hin, daß ihre Kinder die im Rahmen der schulischen Ausbildung gestellten Aufgaben erfüllen.

(7) Den Eltern kann bei Genehmigung durch den Direktor und im Einvernehmen mit dem Lehrer Gelegenheit zu Unterrichtsbesuchen gegeben werden.

#### IV.

#### § 19

##### Belobigungen und Auszeichnungen

(1) Für besondere Leistungen können Schülern gemäß Rechtsvorschriften mit dem Schulabschlußzeugnis Auszeichnungen verliehen werden.

(2) Über die Modalitäten schulspezifischer Belobigungen und Auszeichnungen der Schüler berät und beschließt die Schulkonferenz.

#### § 20

##### Erziehungs- und Ordnungsmaßnahmen

(1) Zur Sicherung der schulischen Bildungs- und Erziehungsarbeit sowie zum Schutz von Personen und Sachen können Erziehungs- und Ordnungsmaßnahmen getroffen werden. Sie müssen zu Art, Schwere und Folgen der Pflichtverletzung durch den Schüler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stehen und sind nur zulässig, wenn andere pädagogische Maßnahmen nicht ausreichen. Zusätzliche Hausaufgaben und Nachsitzen sind unzulässig; körperliche Züchtigung und ehrverletzende Maßnahmen sind verboten.

(2) Modalitäten schulspezifischer Erziehungsmaßnahmen berät und beschließt die Schulkonferenz.

(3) Ordnungsmaßnahmen können bei nachhaltiger Beeinträchtigung der Unterrichtsarbeit, schulischer Veranstaltungen und des gesamten schulischen Lebens sowie bei Gefährdung der am Schulleben Beteiligten und bei vorsätzlicher Beschädigung von Sachen der Schule bzw. der am Schulleben Beteiligten durch einen Schüler ihm gegenüber ausgesprochen werden. Ordnungsmaßnahmen sind:

- Verweis vor der Klassenkonferenz (durch den Klassenlehrer)
- Verweis vor der Schulkonferenz (durch den Direktor)
- Umsetzung in eine Parallelklasse (durch den Direktor)
- Umschulung in eine andere Schule gleichen Bildungsweges (durch die zuständige Schulaufsichtsbehörde)
- Ausschluß von der besuchten weiterführenden Schule, sofern der Schüler seine Schulpflicht bereits erfüllt hat (durch die zuständige Schulaufsichtsbehörde).

Bevor eine Ordnungsmaßnahme ausgesprochen wird, ist der betreffende Schüler und gegebenenfalls der Lehrer des Vertrauens zu hören; vor Ordnungsmaßnahmen nach Spiegelanstrichen 3 bis 5 sind auch die Eltern zu hören.

(4) Über eine festgelegte Erziehungs- bzw. Ordnungsmaßnahme, einschließlich der Gründe, sowie über die Möglichkeit des Einspruchs sind die Eltern des betreffenden Schülers schriftlich zu informieren.

(5) Gegen ausgesprochene bzw. beantragte Erziehungs- bzw. Ordnungsmaßnahmen besteht Einspruchsrecht innerhalb von 2 Wochen beim Direktor bzw. bei der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 V.

### § 21

#### Schlußbestimmungen

(1) Diese Verordnung tritt mit ihrer Veröffentlichung in Kraft.

(2) Gleichzeitig treten außer Kraft:

- die Verordnung vom 29. November 1979 über die Sicherung einer festen Ordnung an den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n — Schulordnung — (GBl. I Nr. 44 S. 433),
- die Verordnung vom 15. November 1966 über die Elternvertretungen an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 Elternbeiratsverordnung — (GBl. II Nr. 133 S. 837).

(3) Die Durchführung allgemeinbildender Lehrgänge zum Erwerb schulischer Abschlüsse und die Abnahme entsprechender Prüfungen an Volkshochschulen bleiben von dieser Verordnung unberührt.

(4) Dieser Verordnung entgegenstehende Regelungen der — Verordnung vom 29. November 1979 über die Pflichten und Rechte der Lehrkräfte und Erzieher der Volksbildung und Berufsbildung — Arbeitsordnung für pädagogische Kräfte — (GBl. I Nr. 44 S. 444) i. d. F. der Zweiten Verordnung vom 25. Januar 1990 (GBl. I Nr. 5 S. 24) sind nicht mehr anzuwenden.

(5) Diese Verordnung gilt bis zum Inkrafttreten entsprechender landesrechtlicher Regelungen.

Berlin, den 18. September 1990

**Der Ministerra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 Maizière  
Ministerpräsident

Prof. Dr. Hans Joachim Meyer  
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für Lehrämter vom 18. September 1990

### Geltungsbereich

#### § 1

(1) Diese Verordnung regelt Rahmenbedingungen der Ausbildung sowie der Ersten und Zweiten Staatsprüfung für Lehrämter für allgemeinbildende Schulen und berufsbildende Schul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sowie in dem Teil von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der BRD bisher nicht gilt.

(2) Sie gilt bis zum Inkraftsetzen von Rechtsvorschriften für die Ausbildung von LehrerInnen in den in Absatz 1 genannten Ländern sowie in dem Teil von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der BRD bisher nicht galt, bis zur Vereinigung beider Teile Berlins.

### Grundsätze

#### § 2

(1) Die Wahrnehmung eines Lehramtes an allgemeinbildenden und berufsbildenden Schulen setzt ein abgeschlossenes wissenschaftliches oder künstlerisches Studium und eine abgeschlossene schulpraktische Ausbildung (Vorbereitungsdienst) voraus.

(2) Die Ausbildung soll LehrerInnen in die Lage versetzen, berufliche Aufgaben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zu erfüllen.

#### § 3

(1) Das Lehrerstudium ist in den wissenschaftlichen und künstlerischen Studiengängen Aufgabe der Universitäten und Hochschulen der in § 1 Abs. 1 dieser Verordnung genannten Länder sowie in dem Teil von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der BRD bisher nicht galt.

(2) Die Universitäten und Hochschulen arbeiten in Fragen der Ausbildung von LehrerInnen zusammen.

(3) Der Vorbereitungsdienst ist Aufgabe der Studienseminare, die dem für das Schulwesen zuständigen Minister unterstehen.

### Ausbildung und Prüfung

#### § 4

Die Ausbildung erfolgt für die Lehrämter in den in § 1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von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der BRD bisher nicht galt.

#### § 5

Die Ausbildung für alle Lehrämter umfaßt das Studium an einer Universität oder Hochschule und den Vorbereitungsdienst. Beide Bestandteile sind mit dem Ziel einer fundierten Ausbildung aufeinander zu beziehen.

#### § 6

(1) Das Studium legt die wissenschaftlichen Grundlagen für die künftige berufliche Tätigkeit.

(2) Das Studium umfaßt die am Ausbildungsziel orientierten fachwissenschaftlichen oder künstlerischen und erziehungswissenschaftlichen Studien. In das Studium sind fachdidaktische und schulpraktische Studien einzubeziehen.

#### § 7

(1) Der Vorbereitungsdienst untersteht der Aufsicht des für das Schulwesen zuständigen Ministers in den in § 1 Abs. 1 dieser Verordnung genannten Ländern.

(2) Der Vorbereitungsdienst dauert 18 bis 24 Monate.

문서 번호 19

통일조약 [발췌] - 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

1990 년 9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부록 I 14 장 중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법들이 변경된다.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대학 계획위원회의 경우 대학건설진흥법에 따라 대학교의 설립 및 확충의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 대신, 단순 다수결만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993 년도 말까지 대학건설진흥법의 부록에 언급된 대학교의 목록에 동독 지역의 대학교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1994 년도 말까지는 동독 지역의 대학교들을 위한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기본법에는 동독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입학심사과정도 전국입합조정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동독 병역의무자의 병역수행 및 병역 중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대학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독 지역에 설립된 연방주들은 1990 년 10 월 3 일 이후 3 년 이내에 대학기본법 규정에 상응하는 연방주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연방직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직업학교, 야간 하우트슐레, 직업 단기과정, 김나지움 및 야간 실업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월간 직업교육 지원금의 액수를 동·서 지역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책정한다.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 Anlage I

**Kapitel XVI****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Sachgebiet A: Hochschulen****Abschnitt II**

Bundesrecht wird wie folgt geändert oder ergänzt:

1. Hochschulaufförderungsgesetz vom 1. September 1969 (BGBl. I S. 1556), zuletzt geändert durch § 80 des Gesetzes vom 26. Januar 1976 (BGBl. I S. 185) <sup>1)</sup>

- a) 7 Abs. 2 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Ein Beschluß des Planungsausschusses kommt zustande, wenn ihm der Bund und die Mehrheit der Länder zustimmen.“

- b) Nach § 14 wird folgender § 14 a eingefügt:

**„§ 14 a****Überleitungsregelungen aus Anlaß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1) Während eines Zeitraums von einem Jahr nach de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können Hochschulen oder Hochschuleinrichtungen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abweichend von § 4 Abs. 2 Satz 1 vorläufig in die Anlage aufgenommen werden. Die vorläufige Aufnahme kann jeweils bis zum Ende eines Jahres, längstens jedoch bis zum Ende des Jahres 1993 erfolgen. Die Bundesregierung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ob bis zu diesem Zeitpunkt die vorläufige Aufnahme erlischt oder eine Aufnahme nach § 4 Abs. 2 erfolgt.

(2) Bis zum Ende des Jahres 1994 kann für Hochschulen und Hochschuleinrichtungen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ein vereinfachtes Verfahren zur Ergänzung eines bereits aufgestellten Rahmenplans oder zur Aufstellung eines Rahmenplans angewandt werden, das von Anforderungen nach § 5 Abs. 2, § 6 und § 8 Abs. 1 Satz 1 und Abs. 2 abweicht.

(3) Der Planungsausschuß beschließt, ob ein vereinfachtes Verfahren nach Absatz 2 angewandt wird. Er legt die Einzelheiten dieses Verfahrens fest.“

2. Hochschulrahmengesetz vom 26. Januar 1976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9. April 1987 (BGBl. I S. 1170)

- a) § 27 wird wie folgt geändert:

- aa) Nach Absatz 2 wird folgender Absatz 3 eingefügt:

„(3) Staatsangehörige eines anderen Mitgliedstaat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sind Deutschen nach Absatz 1 gleichgestellt, wenn die für das Studium erforderlichen Sprachkenntnisse nachgewiesen werden.“

- bb) Der bisherige Absatz 3 wird Absatz 4; in ihm wird das Wort „andere“ durch das Wort „weitere“ ersetzt.

- b) Nach § 33 wird folgender § 33 a eingefügt:

**„§ 33 a****Überleitungsregelungen aus Anlaß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1) Solange die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 und der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dem Staatsvertrag übe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vom 14. Juni 1985 noch nicht beigetreten sind, kann ein Studiengang an Hochschulen in diesen Ländern oder an einer dieser Hochschulen mit Zustimmung des jeweiligen Landes in das Verfahren der Zentralstelle nach § 31 Abs. 1

<sup>1)</sup> Bis zum Erlaß der Landesgesetze nach § 72 Abs. 1 Satz 3 des Hochschulrahmengesetzes in der a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geltenden Fassung bestimmt das bis dahin geltende Landesrecht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sowie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was Hochschulen und Hochschuleinrichtungen im Sinne des § 4 des Hochschulaufförderungsgesetzes sind. Der im Zeitpunkt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bestehende Status der Universitäten, der anderen Hochschulen und der Fachschulen in diesem Gebiet kann im übrigen nur durch Landesgesetz geändert werden.

einbezogen werden. Während eines Zeitraums von fünf Jahren nach de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kann ein Studiengang an Hochschulen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oder an einer dieser Hochschulen mit Zustimmung des jeweiligen Landes in das Verfahren nach § 31 Abs. 1 auch dann als gesonderter Studiengang einbezogen werden, wenn er nach Inhalt und Abschluß im wesentlichen einem Studiengang an den Hochschulen in den anderen Ländern entspricht.

(2) § 32 Abs. 2 Satz 1 Nr. 5 gilt nicht für Bewerber, die vor dem Wintersemester 1991/92 ein Studium an einer Hochschule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abgeschlossen haben.

(3) Solange die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 und der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dem Staatsvertrag übe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vom 14. Juni 1985 noch nicht beigetreten sind und ein Studiengang an Hochschulen dieser Länder nicht nach Absatz 1 Satz 1 in das Verfahren der Zentralstelle einbezogen ist, können die für diese Länder geltenden Quoten nach § 32 Abs. 3 Nr. 1 Satz 5 für die Vergabe der Studienplätze an den Hochschulen in den anderen Ländern abweichend von § 32 Abs. 3 Nr. 1 Satz 6 bemessen werden. Unter den in Satz 1 genannten Voraussetzungen kann auch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nach § 32 Abs. 3 Nr. 2 Satz 1 die Bildung von Quoten für Bewerber mit einer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erworbenen Hochschulzugangsberechtigung vorgesehen werden; § 32 Abs. 3 Nr. 1 Satz 6 sowie Satz 1 gilt entsprechend.

(4)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in Studiengängen an Hochschulen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an Bewerber mit einer in den anderen Ländern erworbenen Hochschulzugangsberechtigung gilt Absatz 3 entsprechend.

(5) Für Zeiten eines Studiums an einer Hochschule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bis einschließlich Wintersemester 1990/91 kann das Landesrecht von § 32 Abs. 3 Nr. 2 Satz 7 abweichende Regelungen treffen.

(6)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nach § 33 Abs. 2 Nr. 1 Satz 1 und Nr. 2 Buchstabe a gelten die Absätze 2 bis 5 entsprechend.“

c) § 34 wird wie folgt geändert:

aa) Der bisherige § 34 wird Absatz 1.

bb) Folgender Absatz 2 wird angefügt:

„(2) Absatz 1 gilt entsprechend für Dienste und Leistungen nach Artikel 23 der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schließlich der dem Wehrdienst entsprechenden Dienste nach den Buchstaben b bis d der Bekanntmachung über den Dienst, der der Ableistung des Wehrdienstes entspricht vom 25. März 1982 (GBl. I Nr. 12 S. 268).“

d) In § 57 f wird der Punkt durch einen Strichpunkt ersetzt und folgender Halbsatz angefügt: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sind die §§ 57 a bis 57 e erstmals auf Arbeitsverträge anzuwenden, die drei Jahre nach de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abgeschlossen werden.“

e) § 72 wird wie folgt geändert:

aa) Absatz 1 wird wie folgt geändert:

aaa) Nach Satz 2 wird folgender Satz 3<sup>2)</sup> eingefügt:

„Innerhalb von drei Jahren nach de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sind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entsprechende Landesgesetze zu erlassen.“

bbb) Der bisherige Satz 3 wird Satz 4. Er wird wie folgt gefaßt:

„§ 9 in der ab 1. Januar 1988 geltenden Fassung, § 27 Abs. 3 in der vom Tage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an geltenden Fassung, § 33 a Abs. 4, die §§ 57 a bis 57 f und § 70 Abs. 6 gelten unmittelbar; bis zum Inkrafttreten entsprechender Landesgesetze gilt § 27 Abs. 1, 2 und 4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unmittelbar.“

bb) Absatz 2 Satz 2 wird wie folgt gefaßt:

„Erstmals für Zulassungen zum Sommersemester 1991, längstens jedoch bis zum Inkrafttreten des Landesrechtes nach Satz 1 sind die Vorschriften der Artikel 7 bis 14 des Staatsvertrages übe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vom 14. Juni 1985 nach Maßgabe der entsprechen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anzuwenden.“

<sup>2)</sup> Unbeschadet der unmittelbar gültigen oder früher umzusetzenden Vorschriften des Hochschulrahmengesetzes sowie anderer unmittelbar gültiger bundesrechtlicher Bestimmungen gelten bis zum Inkrafttreten der Landesgesetze nach § 72 Abs. 1 Satz 3 des Hochschulrahmengesetzes in der am Tag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geltenden Fassung die Rechtsvorschrif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das Hochschulwesen als Landesrecht fort.



cc) In Satz 5 wird die Zahl „1989“ durch die Zahl „1993“ ersetzt.

f) Nach § 75 wird folgender § 75 a eingefügt:

„§ 75 a

Überleitungsregelungen aus Anlaß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 Übernahme des wissenschaftlichen und künstlerischen Personals der Hochschulen in die nach diesem Gesetz vorgesehenen Rechtsverhältnisse ist in dem nach § 72 Abs. 1 Satz 3 erlassenen Gesetz zu regeln. Die Grundsätze des § 75 Abs. 3, 4, 6 und 8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die allgemeinen Regelungen in den Vorschriften des Einigungsvertrages über den öffentlichen Dienst bleiben unberührt. Die mitgliedschaftsrechtliche Stellung derjenigen Beamten und Angestellten, die in ihrem bisherigen Rechtsverhältnis verbleiben, wird durch Landesrecht bestimmt.“

## Sachgebiet B: Ausbildungsförderung

### Abschnitt II

Bundesrecht wird wie folgt aufgehoben, geändert oder ergänzt: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6. Juni 1983 (BGBl. I S. 645, 1680),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2. Mai 1990 (BGBl. I S. 936), und nach den § 2 Abs. 3, § 13 Abs. 4, §§ 14 a, 15 Abs. 4, § 18 Abs. 6, § 18b Abs. 1, § 21 Abs. 3 Nr. 4, § 44 Abs. 1 und § 45 Abs. 4 dieses Gesetzes erlassene Rechtsverordnungen tret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am 1. Januar 1991 in Kraft und werden wie folgt geändert:

1.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a) § 5 Abs. 2 Satz 1 wird wie folgt geändert:

aa) In Nummer 1 wird das Wort „oder“ nach dem Wort „kann“ durch ein Komma ersetzt.

bb) Der Nummer 2 wird das Wort „oder“ angefügt.

cc) Nach Nummer 2 wird folgende Nummer 3 angefügt:

„3. die Ausbildung im Ausland vor dem 1. Oktober 1990 begonnen und für den Monat Dezember 1990 nach dem Stipendien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fördert wurde“.

b) § 6 a wird aufgehoben.

c) § 12 wird wie folgt geändert:

aa) Ab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1) Als monatlicher Bedarf gelten für Schüler

1. von Berufsfachschulen und Fach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nicht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oder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esetz bisher nicht galt, liegt, 250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310 DM,

2. von Abendhauptschulen, Berufsaufbauschulen, Abendrealschulen und von Fachober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Numme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445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555 DM.“

bb) Absatz 2 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Als monatlicher Bedarf gelten, wenn der Auszubildende nicht bei seinen Eltern wohnt, für Schüler

1. von weiterführen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und Berufsfachschulen sowie von Fach- und Fachober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nicht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Absatz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445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555 DM,

2. von Abendhauptschulen, Berufsaufbauschulen, Abendrealschulen und von Fachober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Absatz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535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670 DM.“



문서 번호 20

통일조약 [발췌] - 제 16 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분야, 분야 B: 청소년직업교육지원

1990 년 9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직업교육진흥과 관련된 조항이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서독법들도 통일조약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진흥연방법
- 직업교육진흥 자문단 설립에 대한 명령
- 상위 전문대학, 학원 및 대학 수학기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명령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추가지원 명령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 - 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cc) In Satz 5 wird die Zahl „1989“ durch die Zahl „1993“ ersetzt.

f) Nach § 75 wird folgender § 75 a eingefügt:

„§ 75 a

Überleitungsregelungen aus Anlaß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 Übernahme des wissenschaftlichen und künstlerischen Personals der Hochschulen in die nach diesem Gesetz vorgesehenen Rechtsverhältnisse ist in dem nach § 72 Abs. 1 Satz 3 erlassenen Gesetz zu regeln. Die Grundsätze des § 75 Abs. 3, 4, 6 und 8 sind entsprechend anzuwenden; die allgemeinen Regelungen in den Vorschriften des Einigungsvertrages über den öffentlichen Dienst bleiben unberührt. Die mitgliedschaftsrechtliche Stellung derjenigen Beamten und Angestellten, die in ihrem bisherigen Rechtsverhältnis verbleiben, wird durch Landesrecht bestimmt.“

**Sachgebiet B: Ausbildungsförderung**

**Abschnitt II**

Bundesrecht wird wie folgt aufgehoben, geändert oder ergänzt: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6. Juni 1983 (BGBl. I S. 645, 1680),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2. Mai 1990 (BGBl. I S. 936), und nach den § 2 Abs. 3, § 13 Abs. 4, §§ 14 a, 15 Abs. 4, § 18 Abs. 6, § 18b Abs. 1, § 21 Abs. 3 Nr. 4, § 44 Abs. 1 und § 45 Abs. 4 dieses Gesetzes erlassene Rechtsverordnungen tret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am 1. Januar 1991 in Kraft und werden wie folgt geändert:

1.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a) § 5 Abs. 2 Satz 1 wird wie folgt geändert:

aa) In Nummer 1 wird das Wort „oder“ nach dem Wort „kann“ durch ein Komma ersetzt.

bb) Der Nummer 2 wird das Wort „oder“ angefügt.

cc) Nach Nummer 2 wird folgende Nummer 3 angefügt:

„3. die Ausbildung im Ausland vor dem 1. Oktober 1990 begonnen und für den Monat Dezember 1990 nach dem Stipendien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fördert wurde“.

b) § 6 a wird aufgehoben.

c) § 12 wird wie folgt geändert:

aa) Ab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1) Als monatlicher Bedarf gelten für Schüler

1. von Berufsfachschulen und Fach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nicht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oder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esetz bisher nicht galt, liegt, 250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310 DM,

2. von Abendhauptschulen, Berufsaufbauschulen, Abendrealschulen und von Fachober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Numme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445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555 DM.“

bb) Absatz 2 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Als monatlicher Bedarf gelten, wenn der Auszubildende nicht bei seinen Eltern wohnt, für Schüler

1. von weiterführen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und Berufsfachschulen sowie von Fach- und Fachober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nicht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Absatz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445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555 DM,

2. von Abendhauptschulen, Berufsaufbauschulen, Abendrealschulen und von Fachober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oraussetz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Absatz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535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670 DM.“

d) § 13 wird wie folgt geändert:

aa) Ab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1) Als monatlicher Bedarf gelten für Auszubildende in

1. Fachschulklassen, deren Besuch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oraussetzt, Abendgymnasien und Kollegs,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 12 Abs.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460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500 DM,

2. Höheren Fachschulen, Akademien und Hochschulen,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 12 Abs.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500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540 DM.“

bb) Absatz 2 wird wie folgt gefaßt:

„(2) Die Beträge nach Absatz 1 erhöhen sich für die Unterkunft, wenn der Auszubildende

1. bei seinen Eltern wohn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 12 Abs.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um monatlich 20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um monatlich 65 DM,

2. nicht bei seinen Eltern wohnt, soweit die Ausbildungsstätte

a) in dem in § 12 Abs.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liegt, um monatlich 50 DM,  
b) im sonstigen Geltungsbereich des Gesetzes oder im Ausland liegt, um monatlich 210 DM.“

e) In § 16 Abs. 3 Satz 1 wird nach der Textstelle „Abs. 2 Nr. 2“ die Textstelle „und 3“ eingefügt.

f) In § 24 wird nach Absatz 1 folgender Absatz 1a eingefügt:

„(1a) Abweichend von Absatz 1 ist das Vierfache des Einkommens in den Monaten Oktober bis Dezember des Kalenderjahres vor Beginn des Bewilligungszeitraums maßgebend, wenn der jeweilige Einkommensbezieher seinen ständigen Wohnsitz am 30. Juni 1990 in dem in § 12 Abs. 1 Nr. 1 Buchstabe a bezeichneten Gebiet hatte.“

g) § 40 wird wie folgt geändert:

aa) Dem Absatz 1 werden folgende Sätze angefügt: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errichten die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Ämter für Ausbildungsförderung. Mehrere Kreise und/oder kreisfreie Städte können ein gemeinsames Amt für Ausbildungsförderung errichten.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esetz bisher nicht galt, nehmen die Bezirke die Aufgaben der Ämter für Ausbildungsförderung wahr.“

bb) Dem Absatz 2 werden folgende Sätze angefügt: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sowie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esetz bisher nicht galt, richten die staatlichen Hochschulen für die in Satz 1 genannten Auszubildenden Ämter für Ausbildungsförderung ein. Soweit in den in Satz 4 genannten Ländern Studentenwerke als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errichtet sind, sind sie abweichend von Satz 4 Ämter für Ausbildungsförderung.“

h) § 40 a 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Die Länder können Landesämter für Ausbildungsförderung errichten.“

i) § 42 Abs. 1 Satz 1 wird wie folgt gefaßt:

„Die Länder können Förderungsausschüsse bei Hochschulen errichten.“

k) In § 48 Abs. 4 wird nach der Textstelle „Abs. 2 Nr. 2“ die Textstelle „und 3“ eingefügt.

l) Nach § 58 wird folgender § 59 eingefügt:

„§ 59

Fortzahlung bisheriger Stipendien

(1) Solange ein Bescheid auf Grund dieses Gesetzes nicht ergangen ist, längstens jedoch bis zum 31. März 1991, wird Ausbildungsförderung in Höhe des Förderungsbetrages geleistet, der für den Monat Dezember 1990 auf Grund

1. der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Stipendien an Direktstudenten der Universitäten, Hoch- und Fachschul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Stipendienverordnung – vom 11. Juni 1981 (GBl. I Nr. 17 S. 229), zuletzt geändert durch die Verordnung über die Erhöhung der Unterstützung für Studenten und Lehrlinge mit Kindern vom 16. Juli 1985 (GBl. I Nr. 21 S. 249),

2. der An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Stipendien an Direktstudenten, Forschungsstudenten und Aspiranten der Universitäten, Hoch- und Fachschulen – Stipendienanordnung – vom 29. Juni 1990 (GBl. I Nr. 53 S. 1079)

3. der An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Stipendien an zur Aus- und Weiterbildung in andere Staaten delegierte Bürger der DDR vom 16. Juni 1982 (GBl. I Nr. 29 S. 542),  
für den Besuch einer Ausbildungsstätte nach § 2 festgesetzt worden ist. Dies gilt nur, wenn der Auszubildende die Ausbildung innerhalb desselben Ausbildungsabschnitts fortsetzt, Ausbildungsförderung nach diesem Gesetz beantragt und die Festsetzung nach Satz 1 nachweist.
- (2) Nach Absatz 1 vorab geleistete Beträge werden mit dem nach diesem Gesetz bewilligten Förderungsbetrag verrechnet. Ist nach diesem Gesetz ein geringerer Förderungsbetrag zu zahlen, so ist der überzahlte Betrag nicht zu erstatten.“
- m) Dem § 66 a werden folgende Absätze 6 und 7 angefügt:
- „(6) Auszubildende der Palucca Schule Dresden, der Staatlichen Ballettschule Berlin, der Fachschule für Tanz Leipzig und der Staatlichen Fachschule für Artistik Berlin, die die Ausbildung vor dem 1. Januar 1991 aufgenommen haben, werden in den Klassen 9 und 10 wie Schüler von weiterführen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und in den Klassen 11 und 12 wie Schüler von Berufsfachschulen gefördert.
- (7) Für Auszubildende, die die Ausbildung vor dem 1. Januar 1991 aufgenommen haben und für den Monat Dezember 1990 nach dem Stipendien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fördert wurden, findet § 10 Abs. 3 keine Anwendung.“
2. Verordnung über die Errichtung eines Beirates für Ausbildungsförderung vom 11. November 1971 (BGBl. I S. 1801),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11. Juli 1988 (BGBl. I S. 1028)
- § 2 wird wie folgt geändert:
- In Nummer 1 wird das Wort „vier“ durch das Wort „sechs“ ersetzt.
  - In Nummer 2 wird das Wort „fünf“ durch das Wort „sieben“ ersetzt.
  - In Nummer 3 wird das Wort „zwei“ durch das Wort „drei“ ersetzt.
  - In Nummer 6 wird das Wort „vier“ durch das Wort „sechs“ ersetzt.
3. Verordnung über die Förderungshöchstdauer für den Besuch von Höheren Fachschulen, Akademien und Hochschule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9. Juni 1981 (BGBl. I S. 577),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11. Juli 1988 (BGBl. I S. 1029)
- § 9 wird wie folgt geändert:
- Die bisherigen Sätze 1 und 2 werden Absatz 1.
  - Dem Absatz 1 wird folgender Absatz 2 angefügt:  
„(2) Die Förderungshöchstdauer für die Ausbildung an Hochschul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ie Verordnung bisher nicht galt, bestimmt sich nach der vom zuständigen Fachministerium in den Studienplänen für die jeweilige Fachrichtung festgelegten Regelstudienzeit.“
4. Verordnung über Zusatzleistungen in Härtefällen nach dem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vom 15. Juli 1974 (BGBl. I S. 1449), zuletzt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24. Februar 1986 (BGBl. I S. 315)
- § 9 Abs. 1 wird wie folgt gefaßt:
- „(1) Ausbildungsförderung nach § 8 wird nur in Höhe von 75 vom Hundert des Betrages geleistet, um den die Kosten der Unterkunft bei dem Bedarfssatz
- |   |         |
|---|---------|
| 1. nach § 12 Abs. 2 Nr. 1 Buchstabe a des Gesetzes  | 30 DM,  |
| 2. nach § 12 Abs. 2 Nr. 1 Buchstabe b des Gesetzes  | 80 DM,  |
| 3. nach § 12 Abs. 2 Nr. 2 Buchstabe a des Gesetzes  | 40 DM,  |
| 4. nach § 12 Abs. 2 Nr. 2 Buchstabe b des Gesetzes  | 120 DM, |
| 5. nach § 13 Abs. 1 in Verbindung mit § 13 Abs. 2 Nr. 2 des Gesetzes die in § 13 Abs. 2 Nr. 2 des Gesetzes bezeichneten Beträge |         |
- im Monat übersteigen, höchstens aber ein Betrag von 75 DM im Monat.“
5. Die in Nummer 1 Buchstaben a bis f und h bis m und Nummer 2 bis 4 genannten Änderungen treten am 1. Januar 1991 im gesamten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in Kraft. Die in Nummer 1 Buchstabe g genannte Änderung tritt an dem in Artikel 45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Tag im gesamten Geltungsbereich des Grundgesetzes in Kraft. Nummer 1 Buchstabe g tritt am 31. Dezember 1993 außer Kraft.
6. Die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sförderung für Auszubildende mit Wohnsitz außerhalb des Geltungsbereichs des Gesetzes vom 1. Juni 1990 (BGBl. I S. 998) tritt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0 außer Kraft.





문서 번호 21

통일조약 [발췌] - 제 16 장: 연방 교육·학술부 소관분야, 분야 C: 직업교육

1990 년 9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서독; 동독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장이다. 이 조약에 따라 변경되게 될 서독의 연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법:

직업교육필요직업군 및 전문직직업군 체계에 따른 자격시험합격증은 동 서독간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동법 2 절);

특정 명령들은 연방주총리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의해 효력을 갖는다 (동법 3 절 a 항);

기존의 직업교육관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 (d 항);

사업체들은 견습계약에서 그것이 요구되는 한에 있어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그 목적에 맞게 지속할 의무를 지닌다 (g 항);

전문직직업군 체계에 부합하게 직업교육을 받은 견습생들은 종전의 법률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 (i 항).

출처: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 - 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Sachgebiet C: Berufliche Bildung****Abschnitt II**

Bundesrecht wird wie folgt geändert:

1. Nach § 108 des Berufsbildungsgesetzes vom 14. August 1969 (BGBl. I S. 1112), das zuletzt durch § 19 des Gesetzes vom 23. Dezember 1981 (BGBl. I S. 1692) geändert worden ist, wird eingefügt:

**„§ 108 a**

Gleichstellung von Abschlußzeugnissen im Rahmen der Deutschen Einheit

Prüfungszeugnisse nach der Systematik der Ausbildungsberufe und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und Prüfungszeugnisse nach § 34 Abs. 2 stehen einander gleich.“

**Abschnitt III**

Bundesrecht tritt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mit folgenden Maßgaben in Kraft:

1. Berufsbildungsgesetz vom 14. August 1969 (BGBl. I S. 1112), zuletzt geändert durch § 19 des Gesetzes vom 23. Dezember 1981 (BGBl. I S. 1692), und auf Grund § 21 Abs. 1 und 2, §§ 25, 29 Abs. 1, § 43 Abs. 1 und 2, § 46 Abs. 2, § 47 Abs. 3, § 76 Abs. 2, § 77 Abs. 5, § 80 Abs. 2, § 81 Abs. 4, § 82 Abs. 2, §§ 93, 95 Abs. 4, § 96 Abs. 2 erlassene Rechtsverordnungen

mit folgenden Maßgaben:

- a) Rechtsverordnungen nach § 21 Abs. 1 des Gesetzes bedürfen der gesonderten Inkraftsetzung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Rechtsverordnungen nach § 29 Abs. 1 und § 43 des Gesetzes bedürfen der gesonderten Inkraftsetzung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oder den sonst zuständigen Fachminister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 b) Die zuständige Stelle kann bis zum 31. Dezember 1995 Ausnahmen von den Ausbildungsverordnungen nach § 25 des Gesetzes zulassen, wenn die durch technische Regeln gesetzten Anforderungen noch nicht erfüllt werden können. Die Ausnahmen sind zu befristen.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oder der sonst zuständige Fachminister kann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die Befugnis nach Satz 1 einschränken oder aufheben.
- c) Die Regelungen in Ausbildungsverordnungen nach § 25 des Gesetzes über die 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 27 des Gesetzes) werden nicht angewendet, wenn die zuständige Stelle feststellt, daß eine solche Ausbildung nicht möglich ist.
- d) Bei Inkrafttreten des Gesetzes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IGBBiG – vom 19. Juli 1990 (GBl. I Nr. 50 S. 907) bestehende Ausbildungsverhältnisse werden nach den neu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es sei denn, daß eine Ausbildung nach den neuen Vorschriften nicht möglich ist oder der Lehrling eine Fortsetzung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ausdrücklich wünscht. Sofern die Beendigung des Lehrverhältnisses nach den neuen Ausbildungsverordnungen im bisherigen Betrieb nicht möglich ist, sind das zuständige Arbeitsamt und die zuständige Stelle verpflichtet, den Lehrling zu unterstützen, einen neuen Ausbildungsbetrieb zu finden, der die Ausbildung nach den neuen Ausbildungsverordnungen fortsetzt.
- e) Die Ausbildungszeit soll nach § 29 Abs. 3 des Gesetzes verlängert werden, soweit ei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durchgeführt wird.
- f) Die Anwendung der §§ 76, 77, 80 bis 82, 86, 88, 90, 92 bis 96 des Gesetzes und der auf Grund dieser Bestimmungen erlassenen Verordnungen bestimmt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oder der sonst zuständige Fachminister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 g) Die Betriebe sind verpflichtet, die praktische Berufsausbildung zweckentsprechend aufrecht zu erhalten, soweit dies zur Erfüllung von Lehrverträgen erforderlich ist, die vor Inkrafttreten des Gesetzes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IGBBiG – vom 19. Juli 1990 (GBl. I Nr. 50 S. 907) abgeschlossen worden sind. Für Betriebsakademien und andere der beruflichen Bildung dienende Einrichtungen ist dies mindestens bis zum 31. Dezember 1990 zu gewährleisten. Auf Antrag der Handwerkskammern und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ist durch die Betriebe zu prüfen, inwieweit vorhandene Kapazitäten der praktischen Berufsausbildung (insbesondere Lehrwerkstätten) als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genutzt werden oder als Treuhandvermögen an die vorgenannten Kammern zur Nutzung übertragen werden können.

- h) Solange die in §§ 79, 87, 89 und 91 des Gesetzes genannten zuständigen Stellen nicht bestehen, bestimmt das Land die zuständige Stelle.
- i) Lehrlinge, die gemäß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ausgebildet werden, werden nach den bisherigen Rechtsvorschriften geprüft, soweit nicht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oder der sonst zuständige Fachminister im Einvernehmen mit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Rechtsverordnung, die nicht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Übergangsvorschriften für Verfahren und Zuständigkeiten erläßt.
- k) Die am Tage des Wirksamwerdens des Beitritts laufenden Prüfungsverfahren in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beruflichen Umschulung werden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 **Sachgebiet D: Fernunterricht**

#### **Abschnitt III**

Bundesrecht tritt in dem in Artikel 3 des Vertrages genannten Gebiet mit folgenden Maßgaben in Kraft:

1. Fernunterrichtsschutzgesetz vom 24. August 1976 (BGBl. I S. 2525), zuletzt geändert durch das Gesetz vom 3. Dezember 1976 (BGBl. I S. 3281)

mit folgender Maßgabe:

Ein Fernlehrgang, der von der Staatlichen Zentralstelle für Fernunterricht nach den §§ 12 und 13 des Fernunterrichtsschutzgesetzes zugelassen ist, gilt bis zum 31. Dezember 1991 in den in Artikel 1 Abs. 1 des Vertrages genannten Ländern und in dem Teil des Landes Berlin, in dem das Grundgesetz bisher nicht galt, als zugelassen.

문서 번호 22

계속교육에 대한 본(Bonn) 성명서: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 (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 (KBE)의 요구

1990 년 9 월 21 일

담당자 / 기관: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독일 개신교 성인교육협회 (DEAE); 가톨릭 성인교육 독일연방협회 (KBE)

내용:

이 문서는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을 담당해 오던 서독의 단체들의 협의회 대표들이 통일 직전인 1990 년 9 월 21 일에 서독의 수도인 본에 모여서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될 신연방주에서도 계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업무는 법률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과 규칙을 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기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노동진흥법의 적용을 보장하여 계속교육기관들이 고용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출처: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4 f.



## 5.8 Bonner Erklärung zur Weiterbildung

*Forderungen des DVV, der DEAE und der KBE  
vom 21. September 1990*

### 1. Gesetzgebung zur Weiterbildung

Die Vereinigung Deutschlands hat Konsequenzen für das Bildungssystem. Deshalb sind die verstärkt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sowie eine Gesetzgebung zur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otwendig. Der beschleunigte Wandel auf allen Lebensgebieten erfordert den Beitrag der Weiterbildung zur Bewältigung des täglichen Zusammenlebens, zur Einübung in die neuen Lebensverhältnisse, zur persönlichen Fortbildung und zur beruflichen Mobilität. Als Erwachsener sich weiterzubilden, ist nicht nur eine private Angelegenheit. Als fundamentale Gemeinschaftsaufgabe bedarf Erwachsenenbildung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Sie muß sich im besonderen Maße auf allgemeine und politische Weiterbildung beziehen sowie berufliche und kulturelle Weiterbildung einschließen.

Als Förderungsaufgabe des Staates muß die Weiterbildung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setzlich verankert werden. Für die künftigen Länder der bisherigen DDR sollte sich die Weiterbildungsgesetzgebung orientieren

- an den Grundsätzen von Pluralität der Weiterbildung;
- an der Forderung nach Offenheit der Weiterbildung für alle Bürgerinnen und Bürger und für alle Angebote;
- an den Grundsätzen einer investiven, möglicherweise an der Einwohnerzahl eines bestimmten Einzugsgebietes orientierten Förderung;
- an dem Gebot der Kooperation von Volkshochschulen und anerkannten Trägern der Erwachsenenbildung;
- an der öffentlichen Verpflichtung der Kommunen und des Staates, durch eigene Einrichtungen als Selbstverwaltungsaufgabe und durch Förderung anderer Träger Weiterbildung wahrzunehmen.

### 2. Übergangsregelung

Wenn Weiterbildung in einem vereinten Deutschland offen für alle sein soll und als öffentliche Förderungsaufgabe anerkannt wird, ist jedoch nicht nur eine Gesetzgebung zur Ordnung und Förderung des Weiterbildungsbereichs erforderlich, sondern auch

- eine gezielte Übergangsfinanzierung für erhaltenswer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 zügiger Aufbau pluraler Weiterbildungsstrukturen;
- eine verstärkte Anwendung des Förderungsinstrumentariums für die allgemeine und berufliche Weiterbildung. Dazu gehört insbesondere die Ausweitung der Förderung nach dem Bundesjugendplan und die Nutzung des Arbeitsförderungs-

gesetzes, um u.a.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uch für di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zu ermöglichen;

- zeitlich befristete Maßnahmen zur Information, Beratung und konkrete Hilfen beim Prozeß der Veränderung der Angebote sowie bei der Mitarbeiterfortbildung;
- die Vermittlung personaler Kompetenz zur Information und Beratung durch befristete Freistellungen und Neueinstellungen von Erwachsenenbildnern aus der Bundesrepublik, die für eine bestimmte Zeit in den künftigen Ländern der bisherigen DDR in der Weiterbildung tätig werden.

### 3. Grundsätzliche Verpflichtungen

Diese Aufgaben werden im Rahmen partnerschaftlicher Zusammenarbeit zwischen den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wahrgenommen. Dazu ist es zwingend erforderlich, daß in den Haushalten der Kommunen, der Länder und des Bundes Mittel für die Weiterbildung der Träger, für Einzelmaßnahmen - z.B. Begegnungsprogramme und internationaler Austausch, Beratungsinitiativen u.a. - und für bundesweit arbeitende Stellen - etwa die Dienstleistungsinstitute der Erwachsenenbildungsverbände,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a. - bereitgestellt werden.

Der Deutsche Volkshochschul-Verband, die Deutsche Evangelische Arbeitsgemeinschaft für Erwachsenenbildung und die Katholische 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Erwachsenenbildung bekräftigen ihre Verpflichtung für die Weiterbildung in einem vereinten Deutschland und fordern deshalb die Anerkennung der Erwachsenenbildung als fundamentale Gemeinschaftsaufgabe, die der verstärkten öffentlichen Förderung durch Kommunen und Staat bedarf, damit ihre Offenheit gewahrt bleibt und ihre Angebote von allen Bürgerinnen und Bürgern genutzt werden können.

*Quelle:* Volker, Otto und Brigitte Winger: Gesetzgebung zur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2, S. 89-91.

## 5.9 *Forderungen an die politische Bildung beim Vereinigungsprozess (1990)*

*Aus den Vorstellungen des Arbeitskreises Arbeit und Leben (DGB/VHS) (1990)*

1. Angesichts der dramatischen politischen Veränderungen in der DDR und im Verhältnis beider deutscher Staaten zueinander bleibt die Grundaufgabe politischer Bildung - insbesondere wenn sie sich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verpflichtet fühlt:



문서 번호 23

브란덴부르크 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 단계 "사회교과"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 년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

이 문서는 중등교육 2 단계 대상 “사회 교과” 영역 교육과정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이 도입될 교과과목의 과제와 목표가 요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국가시민 교과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어진 “진리”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 대신에 정치적 내용을 비판적이지 성찰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정치시민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들이 복합적인 사회적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는데 참여하도록 장려받아야 하며 정치적 극단주의에 몰두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본 교과계획에서는 사회 교과에 있어 교수학적 구상 및 다루어질 만한 주제분야들이 제시되었다.

출처: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hänge von Ziel und Mittel. Ein Ziel des Unterrichts besteht in der Fähigkeit, philosophisch relevante Texte elementar zu erschließen. Zugleich ist diese Fähigkeit ein Mittel, zu philosophischen Inhalten vorzudringen.

Wesentlich für den Unterricht sind ferner analytische Methoden der empirischen Sozialforschung in Gestalt von Beobachtung, Befragung usw., durch die Meinungen, Haltungen, Verhaltenstendenzen ermittelt werden. Dabei geht es um Auskünfte über das Denken und Handeln konkreter Menschen und auch um Elemente gesellschaftlicher Aktion, in der die Schüler sich selbst und Bereiche ihrer gesellschaftlichen Umwelt erkunden und verändernd auf sie einwirken. Besonders in diesem Zusammenhang kann die Arbeit an Projekten (auch an fachübergreifenden) von Interesse sein.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 10.9 Politische Bildung in Brandenburg

*Aus dem Vorläufigen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für die Sekundarstufe I (1991)*

### 1. Ausgangsposition, Ziele und Aufgaben

Die Ereignisse des Jahres 1989 haben zu neuen Chancen für jene politischen Leitideen geführt, die eine humane politische Ordnung möglich machen: Menschenwürde, Freiheit, Pluralismus, Rechtsstaat, parlamentarische Demokratie.

Vor dem Land Brandenburg steht nun die Aufgabe, auf neu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ie ökonomischen, sozialen, ökologisch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Herausforderungen der deutschen Einheit zu meistern.

Eine Demokratie kann nur durch die Aktivität ihrer Bürgerinnen und Bürger wachsen. Deshalb kommt im gegenwärtigen Prozeß gesellschaftlicher Erneu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grundlegende Bedeutung zu. Sie soll das Interesse junger Menschen für Politik fördern und ebenso ihr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am Prozeß der politischen Meinungs- und Willensbildung und der Vertretung und Durchsetzung von Interessen teilzunehmen.

An die Stelle der Erziehung zu vorgegebenen "Wahrheiten" tritt eine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die zur Toleranz, Achtung vor der menschlichen Individualität, Eigenverantwortlichkeit und Kritikfähigkeit herausfordert und ideologische Indoktrination ausschließt. Das erfordert eine grundlegende Neugestaltung der politischen Bildung und Erziehung in einem neuen Unterrichtsfach, das sich in

der Zielsetzung und seinem Inhalts- und Methodenkonzept prinzipiell vom bisherigen Staatsbürgerkundeunterricht unterscheidet. Der vorliegende Rahmenplan für Politische Bildung stellt sich den Erfordernissen eines demokratischen politischen Unterrichts und ist eindeutig dem kritisch-reflexiven Umgang mit politischen Inhalten gewidmet. Die eigentliche Herausforderung des Faches besteht auch darin, sowohl die Abwendung Jugendlicher von Politik aufzugreifen als auch ihr Engagement bis hin zu den extremen Formen ernst zu nehmen und zum Gegenstand der Auseinandersetzung zu machen. Politische Bildung orientiert sich an den Prinzipien des Grundgesetzes und an den allgemeinen Menschenrechten (Menschenrechtskonvention der UNO); sie knüpft an Ideen der Aufklärung, der Arbeiterbewegung, der Frauenbewegung und anderer emanzipatorischer Bewegungen an. Politische Bildung soll zum Verständnis der erlebten Wirklichkeit beitragen und aufzeigen, wie diese Wirklichkeit gestaltbar und veränderbar ist.

Eine Reihe nationaler und internationaler Entwicklungen und die globale Gefährdung der Welt fordern gegenwärtig neues politisches Denken und Handeln des einzelnen und der Gesellschaft heraus. Zu diesen Entwicklungen gehören:

- die aktuelle politische, gesellschaftliche und wirtschaftliche Situation, die durch vielfältige Verwerfung, Umbrüche und Neuerungen gekennzeichnet ist, alte Feindbilder und Ideologien, die verfallen, und politische Strukturen, die sich auflösen;
- der Einigungsprozeß in Deutschland und Europa, mit dem Nationalitätenkonflikte und Unabhängigkeitsbestrebungen der Nationen Osteuropas, Asiens und anderer Teile der Welt einhergehen;
- das sich verändernde Ost-West-Verhältnis, das zunehmend überlagert wird vom Nord-Süd-Konflikt;
- Prozesse globaler Art, die dazu herausfordern, die Welt zunehmend als ein System zu begreifen, in dem alle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lichen und ökologischen Aspekte vernetzt sind.

Diese Problemlagen und Wandlungsprozesse sind zugleich Ansprüche an politische Bildung, an das, was junge Menschen wissen und lernen müssen, um in der Gegenwart und Zukunft bestehen zu können.

Die Beschäftigung mit der Entwicklung, den Strukturen und der Hinterla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ist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ür das Verständnis aktueller nationaler und internationaler Prozesse. Dabei ist es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m Land Brandenburg besonders wichtig, an jeweilige Erfahrungen anzuknüpfen, die Formen autoritärer Herrschaft aufzuarbeiten und sich mit den überdauernden Prägungen und Verhaltensweisen auseinanderzusetzen.

Politische Bildung soll den Heranwachsenden Orientierungshilfe in der komplexen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sein. Sie orientiert sich in ihrem Ziel und ihren Inhalten an der Persönlichkeit des Menschen und versteht dabei Politik als die ständig neu gestellte Aufgabe, menschliches Zusammenleben in Freiheit, Frieden und Gerechtigkeit zu gestalten und zu gewährleisten. An diesem Verständnis soll konkrete Politik gemessen werden. Bei der Gestaltung des Unterrichts sind folgende Grundsätze von Bedeutung:

- Überwältigungsverbot: Es ist nicht erlaubt,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 mit welchen Mitteln auch immer - im Sinne erwünschter Meinungen zu überrumpeln und damit an der Gewinnung eines selbständigen Urteilens zu hindern:

- Kontroversität: Was in Wissenschaft und Politik kontrovers ist, muß sich auch im Unterricht kontrovers zeigen.
- Berücksichtigung der Interessenlage: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müssen in die Lage versetzt werden, eine politische Situation und ihre Interessenlagen zu analysieren sowie nach Mitteln und Wegen zu suchen, die vorgefundene politische Lage im Sinne ihrer Interessen zu beeinflussen.

Diese Grundsätze führen zum Begriff der Emanzipation, der als Richtwert des politischen Lernens verwendet wird. Im Laufe einer langen Begriffsgeschichte hat das Wort Emanzipation Traditionen der Aufklärung in sich aufgenommen und meint Befreiung von Unmündigkeit. In der politischen Bildung wird darunter ein Lernprozeß verstanden, in dem Schülerinnen und Schüler die komplexer und schwerer durchschaubar werden Welt besser begreifen, sich nicht blind in die Gegebenheiten fügen und aufgrund von Sachkenntnis und Urteilsfähigkeit bereit und fähig werdende, Selbst- und Mitbestimmung in Politik und Gesellschaft zu praktizieren. Der Begriff Emanzipation wird in den Qualifikationen entfaltet (vgl. Kapitel 2.1).

Die Vermittlung von Kenntnissen und Einsichten ist Grundlage für die Entwicklung von Urteils- und Entscheidungsfähigkeit einerseits und die Befähigung zum sozialen Handeln andererseits. Diese sind Voraussetzungen für gesellschaftlich verantwortliche, politische Partizipation. Es gibt keine politische Bildung ohne soziales Lernen.

Die Kenntnisse sozialwissenschaftlicher Instrumentarien sollen helfen, Erfahrungen über die politisch-gesellschaftliche Wirklichkeit zu erschließen, Urteile auf ihre Begründungen zu prüfen und Entscheidungen durch eine Diskussion sozialer Handlungsalternativen vorzubereiten.

Politisches Lernen verlangt somit di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Erfahrungen der gesellschaftlichen Realität, gegebenenfalls die Veränderung von Einstellungen und Verhaltensweisen sowie von Verhältnissen, die das Leben in ein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notwendig macht.

## 2. Qualifikation und didaktische Konzeption

### 2.1 Qualifikation und Schlüsselprobleme des Faches

Der Unterricht im Fach Politische Bildung soll zu Bewertung und Bewältigung von Lebenssituationen beitragen, indem er sich an Qualifikationen orientiert, die dem emanzipatorischen Grundgedanken folgen.

Bewältigung individueller und gesellschaftlicher Lebenssituationen schließt den Erwerb von Kenntnissen, Fähigkeiten, Fertigkeiten und Einsichten ein. Gleichwohl erschöpft sich darin nicht der Begriff der Qualifikationen. Die Qualifikationen sind auf den rational und kritisch denkenden, selbständig und unabhängig urteilenden sowie sozial verantwortlich handelnden Menschen bezogen. Gerade in dieser Hinsicht gibt es - auch nach dem Zusammenbruch der zentralistischen Strukturen und der mit diesen Strukturen verbundenen politischen Entmündigung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 einen erheblichen Nachholbedarf. Es geht darum, eigene Interessen

mit sozialer Verantwortung, Kompetenz und entsprechendem Engagement zu verknüpfen.

Die Qualifikationen bilden die Grundlage für die zu entwickelnden Zielvorstellungen des Unterrichts. Diese sind im Zusammenhang mit den Unterrichtsthemen durch die Lehrerinnen und Lehrer selbständig auf einen bestimmten Inhalt hin zu präzisieren und anzuwenden.

In den Qualifikationen drückt sich durchgehend die pädagogische Grundorientierung aus, Bildung als Fähigkeit und Bereitschaft zur Selbstbestimmung, zur Mitbestimmung und zur Solidarität aufzufassen. Von daher stehen die nachfolgend genannten Qualifikationen in einem engen Zusammenhang.

Übersicht über die Qualifikationen im Fach Politische Bildung<sup>1</sup>

Fähigkeit und Bereitschaft,

- (1) sich in gesellschaftlichen,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Zusammenhängen zu rechtzufinden, Herrschaftsverhältnisse nicht ungeprüft hinzunehmen, sie auf ihren Sinn, auf ihre Zwänge, Zwecke und Notwendigkeiten hin zu befragen und die ihnen zugrundeliegenden Interessen, Normen und Wertvorstellungen kritisch zu prüfen;
- (2) die neuen Chancen zur Einflußnahme auf gesellschaftliche,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Strukturen, Herrschaftsverhältnisse und Entscheidungsprozesse kritisch zu hinterfragen, zu verstehen, zu nutzen und mitzugestalten;
- (3) Kommunikation und Kommunikationsmittel als wichtigen Faktor beim demokratischen Umbau in Gesellschaft und Wirtschaft zu verstehen, Interessen und Machtgefälle zu prüfen und Teilnahmemechanismen wahrzunehmen;
- (4) in politischen Alternativen zu denken und zu lernen, sich zu engagieren, auch gegen Widerstände Entscheidungen auf demokratische Weise herbeizuführen, in unterschiedlichen sozialen Gruppen mitzuarbeiten und dabei Belastungen auszuhalten;
- (5) sich selbst zu verwirklichen, eigene Vorstellungen vom glücklichen, erfüllten Leben zu entwickeln und in sozialer Verantwortung wahrzunehmen, eigene Rechte und Interessen zu vertreten, aber auch gesellschaftliche Interessen anderer (z.B. Benachteiligter) zu erkennen und ihnen gegebenenfalls den Vorrang zu geben;
- (6) das Lebensrecht und die Eigenständigkeit anderer Gesellschaften zu akzeptieren, für wirksame Sicherheitskonzepte und für die Interessen benachteiligter Völker einzutreten, auch individuelle Verantwortung für globale Probleme zu erfassen;
- (7) durch eigenes Verhalten und durch Teilnahme an Bürgerinitiativen und Bürgerbewegungen Verantwortung für heutige und künftige Lebensbedingungen mit zu übernehmen;
- (8) die Arbeit als Bedingung für individuelle und gesellschaftliche Existenzsicherung und als Faktor für Selbstverwirklichung und politische Beteiligung zu verstehen und dies im individuellen Lebenskonzept zu berücksichtigen, sich für die Demokratisierung und Humanisierung der Arbeitswelt einzusetzen.

Bei der Anordnung der vier Lernfelder (Gesellschaft - Wirtschaft - Demokratie - die Eine Welt) im Fach Politische Bildung spielen - neben dem Bezug auf die Qualifikationen - vor allem gesellschaftliche Schlüsselprobleme eine konstituie-

---

<sup>1</sup> in Anlehnung an: Das Kultusministeri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Richtlinien für den Politikunterricht, 3. Auflage, Düsseldorf 1987

rende Rolle. Politische Probleme sind in unterschiedlichem Grade mit ökonomischen, sozialen, regionalen und globalen Problemen und Gefährdungen verbunden. Schlüsselprobleme in diesem Sinne sind u.a.:

- (1) Krieg, Frieden und Friedenssicherung (Bürgerkrieg, Gefahr globaler Vernichtung, Verlagerung in die Dritte Welt, Rüstungskontrolle, Abrüstung, Verfassungsauftrag zur Völkerverständigung);
- (2) Sicherung natürlicher Lebensgrundlagen (Zerstörung von Lebensgrundlagen, Interessenkonflikt, ökologisch verantwortete Wirtschaftsordnung);
- (3) Verhältnis zwischen Industriegesellschaften und Entwicklungsländern (Diskrepanz zwischen wirtschaftlichen Teilinteressen und deren sozialen und ökologischen Auswirkungen, Verständnis der verschiedenen Gesellschaften als Eine Welt);
- (4) Zusammenleben verschiedener Kulturen, Nationen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Rechtsextremismus, Linksextremismus, Humanisierung, Menschenrechte, Toleranz), Existenz und Identitätsverlust von Gesellschaften und sozialen Gruppen (soziale Auswirkungen von Umbruchsituationen, Entstehen demokratischer Ansätze);
- (5) wachsende Komplexität der sozialen,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Entscheidungsprozesse und das Problem der Machtstrukturierung (Gefährdung demokratischer Mitbestimmung im Bereich der Grundsatzentscheidungen, Gewicht der demokratischen Kontrolle, Demokratie lernen);
- (6) politische Kontrolle gegen Informations- und Datenmonopolisierung (Gefährdung politischer und kultureller Identität durch Informationstechnologien und Massenmedien);
- (7) Aufbau sozialer und ökologischer Marktwirtschaften, Entfremdung und Verfügbarkeit von Arbeit, Effizienz und soziale, ökologische Verantwortung.

Die hier genannten Schlüsselprobleme sind übergreifende grundlegende Orientierungen, die sowohl individuell als auch global existentielle Fragen berühren, mit denen sich Politische Bildung befassen muß. Im thematischen Kontext bilden die Schlüsselprobleme und die Qualifikationen die Grundlage für die Entfaltung der Lernfelder, Themenbereiche, Inhalte und Probleme.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문서 번호 2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내 사회교과: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 년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 개편을 위해 마련한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목은 사회적이자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단지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추상화 및 난이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출처: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 10.10 *Sozialkunde in Mecklenburg-Vorpommern*

### *Aus den Vorläufigen Rahmenrichtlinien für Hauptschule, Realschule und Gymnasium (1991)*

[...]

Der Sozialkundeunterricht stellt die politischen Grundideen der Demokratie in ihrem geschich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Kontext vor und bietet den künftigen Staatsbürgern Orientierungshilfen an. Indem er soziale und politische Erscheinungen wie auch aktuelle Konflikte bewußtmacht und analysiert, schärft er den Blick für politische Zusammenhänge, ermöglicht Rationalität des Urteils und fördert die Motivation der Schüler für engagierte Anteilnahme an politischen Fragen.

Diesem Anspruch entsprechend kommt es auf die Herausbildung von Fähigkeit und Bereitschaft der Schüler an,

- sich für die Idee der Demokratie einzusetzen und sich gegen Gefahren für die Demokratie zu wehren und so zur Wahrung von Freiheit und Menschenwürde beizutragen;
- die Chancen für Selbstverwirklichung und aktive Einflußnahme auf Gesellschaft und Politik zu erkennen und als Staatsbürger diese Chancen zu nutzen;
- in sozialer Kooperation persönliche Verantwortung zu tragen;
- Sinn und Zweck gesellschaftlicher und politischer Strukturen zu erfassen und sie sich kritisch anzueignen;
- Konflikte kulturvoll auszutragen, Toleranz und Achtung gegenüber anderen politischen, weltanschaulichen und religiösen Auffassungen und Bindungen zu üben;
- die eigenen Interessen im Zusammenhang mit den Interessen anderer und mit dem Gemeinwohl zu sehen und auf ihre Berechtigung und Durchsetzbarkeit zu prüfen;
- den Medien kritisch zu begegnen, sich selbst Informationen beschaffen zu können und dadurch eigene Urteilsfähigkeit anzustreben;
- im unmittelbaren Wahrnehmungs- und Lebensbereich eigene Lösungsvorschläge zu finden.

Unabhängig von der jeweiligen Schulart sieht der Lehrplan in allen Schularten in den einzelnen Jahrgangsstufen die gleichen Unterrichtsstoffe vor. Der Unterschied des Unterrichts an den verschiedenen Schularten ist methodischer Art und zeigt sich vor allem in bezug auf Abstraktionsebenen und Komplexitätsgrade. Die im Lehrplan genannten Inhalte sind verbindlicher Unterrichtsstoff. Die Reihenfolge der Behandlung innerhalb des Schuljahres wird vom Lehrer bzw. der Fachkonferenz entschieden.

Im Sozialkundeunterricht ist ein methodisches Konzept erforderlich, das durch einen demokratischen, kommunikations- und kooperationsfördernden Unterrichtsstil, durch aktivierende Unterrichtsmethoden und offene Lernverfahren geprägt ist.

Methoden im Sozialkundeunterricht müssen sich am Ziel der Selbstbestimmung des mündigen Bürgers und der Erweiterung seines Freiheitsspielraums in Staat und Gesellschaft auf der Grundlage wachsender Demokratiefähigkeit orientieren. Das impliziert den Vorrang methodischer Verfahren, die forschendes Lernen und selbstständiges politisches Urteilen fördern. Regere geistiger Gedanken- und Meinungsaustausch und praktische Aneignungs- und Anwendungstätigkeit müssen die Qualität des Unterrichts im Fach Sozialkunde bestimmen.

In Sozialkunde lernen die Schüler, die Begriffssprache der politischen 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n Alltagssprache in ihren Zusammenhang einzuordnen, kritisch zu hinterfragen und auf ihren Konkretheitsgehalt zu überprüfen. So bestimmt die Auseinandersetzung auch mit der Tradition den Unterricht in Sozialkunde.

Der Schüler soll lernen, genau zuzuhören, sachlich und exakt zu argumentieren und seine Meinung angemessen zu vertreten. Im Gespräch erhält er Gelegenheit, Toleranz zu üben und andere Tugenden auszubilden, die er als mündiger Staatsbürger braucht, um selber in der Gesellschaft etwas zu bewirken und sich mit bestimmten Ansichten und Plänen durchsetzen zu können. Dem Anliegen, einen mündigen Bürger heranzubilden, der gesellschaftliche Zustände und politische Entscheidungen kritisch hinterfragt und sich auch selbst engagiert, entspricht ein Unterricht mit ausgeprägt handlungsorientierten Zügen.

[...]

*Quelle:*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 Sozialkunde - 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 10.11 *Gemeinschaftskunde/Rechtserziehung in Sachsen*

*Aus dem Lehrplan für die Mittelschule (1992)*

### Bildungs- und Erziehungsauftrag der Mittelschule

"Der Bildungs- und Erziehungsauftrag der Schule wird bestimmt durch das Recht eines jeden jungen Menschen auf eine seinen Fähigkeiten und Neigungen entsprechende Erziehung und Bildung ohne Rücksicht auf Herkunft oder wirtschaftliche Lage." (§ 1 Abs. 1 des Schulgesetzes des Freistaates Sachsen).

Die Mittelschule als differenzierte Schulart wird in besonderer Weise diesem Auftrag gerecht, der von den Wert- und Ordnungsvorstellungen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prägt ist. Sie ist die wichtigste neue Schulart innerhalb der Sekundarstufenausbildung I. Die Mittelschule hat einen entscheidenden Beitrag zur soliden Vermittlung einer breiten Allgemeinbildung an die junge Generation zu leisten. Sie vermittelt neben der allgemeinen berufsvorbereitende Bildung und schafft Voraussetzungen für eine be-

문서 번호 25

작센-안할트 주 내 사회교과. 중등학교 중 하우프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 년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사회과목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계획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하우프트슐레에서의 사회과목 수업은 학생들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연관지으며 이루어진다. 일상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행위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über abweichenden Auffassungen der Schüler. Kontroverse Themen sind als solche darzustellen, wobei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Normen und Wirklichkeit aufzuzeigen ist.

[...]

*Quelle:*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Lehrplan Mittelschule - Gemeinschaftskunde/Rechtserziehung, Klassen 8-10, Dresden 1992.

## 10.12 *Sozialkunde in Sachsen-Anhalt*

*Aus den Vorläufigen Rahmenrichtlinien für die Sekundarschule - Bildungsgang Hauptschule (1991)*

[...]

### 1.1 Aufgaben

Im Sozialkundeunterricht soll das Verständnis der Schülerinnen und Schüler für soziales, wirtschaftliches und politisches Geschehen gefördert und ein Beitrag zur Vorbereitung der Schülerinnen und Schüler auf ein Leben in ein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esellschaft geleistet werden. Die Ziele des Faches sind an das Grundgesetz und die darin formulierten Grundwerte - wie Menschenwürde, Freiheit, Rechtsgleichheit, soziale Gerechtigkeit, Frieden, Toleranz usw. - gebunden. Diese sind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als Maßstab sozialen und politischen Handelns zu verdeutlichen.

Der Unterricht in der Hauptschule baut auf Wahrnehmungen und Erfahrungen der Schülerinnen und Schüler im sozialen,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Bereich auf.

Bereits verfestigte Einstellungen und Erfahrungen, die durch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in den Unterricht eingebracht werden, sollen mit Hilfe neuer Erkenntnisse, Erfahrungen und Beurteilungsmaßstäbe geprüft, und wenn notwendig, verändert werden.

Alltagserfahrungen sollen durchdacht und mit dem Ziel verarbeitet werden, Handlungsmöglichkeiten zu erkennen und Handlungsalternativen abzuwäge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rfahren von Chancen und Grenzen demokratischen Handelns und werden so auf die verantwortungsbewußte Wahrnehmung ihrer Pflichten und Rechte als mündige Bürger vorbereitet.

Im Sozialkundeunterricht muß deutlich werden, daß es in ein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 verschiedene und gegensätzliche Interessen gibt. Deshalb muß der Lehrer im Unterricht kontroverse Auffassungen zur Kenntnis bringen und dafür

Sorge tragen, daß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verschiedene Standpunkte kennenlernen und Probleme aus unterschiedlicher Sicht betrachten, bevor sie eigene Entscheidungen treffen.

Der Unterricht soll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aus dem Bereich subjektiver Meinungen und Behauptungen herausführe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sollen es in diesem Zusammenhang lernen, nach Argumenten und Begründungen zu fragen und behutsam an Fachbegriffe, die für das Verstehen sozialer, wirtschaftlicher Zusammenhänge notwendig sind, herangeführt werden und den Umgang mit ihnen üben.

In diesem Sinne soll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auch geholfen werden, die Ursachen und Folgen des Zusammenbruchs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zu verstehen und zu beurteilen.

## 1.2. Fachdidaktische Prinzipien

### Situations- und Problemorientierung

Situations- und problemorientierter Sozialkundeunterricht baut auf den Sozialerfahrungen der Schülerinnen und Schüler auf, es werden konkrete Lebenssituationen einschließlich ihrer Probleme thematisiert und Möglichkeiten des Umgangs mit ihnen aufgezeigt. Dadurch trägt Sozialkundeunterricht dazu bei, den Erfahrungshorizont der Schülerinnen und Schüler zu erweitern und sie zu befähigen, gewonnene Erfahrungen zu analysieren und zu bewerten.

### Handlungsorientierung

Sozialkunde leistet einen Beitrag dazu, Schülerinnen und Schüler zur Teilnahme am gesellschaftlichen Leben zu befähigen, ohne vorzuschreiben, ob und in welcher Weise die politische Partizipation zu erfolgen hat. Sozialkunde hilft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Probleme zu erkennen, Handlungsmöglichkeiten zu diskutieren und deren Folgen abzuwägen. Durch realitätsbezogenes Lernen trägt der Sozialkundeunterricht zur Entwicklung von Handlungskompetenz bei.

### Fachwissenschaftliche Orientierung

Der Sozialkundeunterricht ist an Fachwissenschaften - wie Politikwissenschaft, Soziologie, Ökonomie, Rechtswissenschaft, Geschichte, Geographie, Philosophie und Psychologie - in dem Sinne orientiert, daß er aus dem Bereich subjektiver Meinungen, Behauptungen und eventuell bestehender Vorurteile herausführt zu allgemeinen Aussagen, die durch Argumente gestützt und durch Untersuchungsergebnisse belegt werden können. Im Sozialkundeunterricht üben sich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auf altersgemäße Weise in Arbeitsweisen, die sie befähigen, mit politisch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Problemen zunehmend selbständig umzugehen.

### Aktualitäts- und Zukunftsorientierung

Sozialkunde beschäftigt sich vor allem mit solchen sozialen,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Situationen und Problemen, die jetzt und in Zukunft für die Men-



schen in Deutschland, in Europa und der Welt von Bedeutung sind.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rhalten somit die Möglichkeit, sich mit gegenwärtigen Entwicklungen und Streitfragen auseinanderzusetzen, Folgen von Entscheidungen zu analysieren und Möglichkeiten der Zukunftsgestaltung zu diskutieren. Bei der Frage nach Ursachen und Entwicklung von Problemen ist es oft notwendig, auf den historischen Aspekt zurückzugreifen. Dieser kann jedoch nur einer von mehreren (z.B. den rechtlichen, politischen, ökonomischen, sozialen) Aspekten zur Erklärung eines Problems sein.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 10.13 *Sozialkunde in Thüringen*

#### *Aus den Vorläufigen Lehrplanhinweisen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1991)*

[...]

Die Erziehungsarbeit in der Schule ist an die i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im Vorläufigen Bildungsgesetz des Landes Thüringen verankerten Grundwerte menschlichen Zusammenlebens gebunden.

Das Fach Sozialkunde führt in die gesellschaftlichen Lebensbedingungen des Menschen ein. In seinem Mittelpunkt steht die Gesellschaft, in der wir uns bewegen. Das Fach hat die Aufgabe, den raschen gesellschaftlichen Wandel sichtbar zu machen und die zunehmende Komplexität unserer Welt begreifen zu helfen. Es fördert die Erkenntnis, daß das Leben des Menschen erheblich von Politik bestimmt wird. Deshalb gehört ein Verstehen von Politik auch zum Verstehen und bewußten Gestalten des eigenen Lebens.

Politische Bildung schafft Voraussetzungen für eine gelebte Demokratie. Die freiheitlich Demokratie bedarf des durch die Schule gebildeten und informierten Bürgers, der es gelernt hat, politisch rational und verantwortlich zu urteilen und zu handeln. Daraus ergeben sich für den Sozialkundeunterricht folgende wichtige Zielstellungen:

1. Als Grundlage für eine Auseinandersetzung mit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Fragestellungen müssen den Schülern fundierte Kenntnisse vermittelt werden.
2. Das Erfassen von Zusammenhängen aus den Bereichen Politik, Wirtschaft, Recht, Ökologie und Geschichte stellt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sachgerechte Problemanalysen dar.



문서 번호 26

튀링엔 주 내 사회교과: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 년

담당자 / 기관: 튀링엔주 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 튀링겐주의 문화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 교육과정에 관해 발표한 임시계획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목의 과제는 급속한 사회 변동을 깨닫게 하며 점차 더 복잡해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의 정치적 차원을 인식하게끔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이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을 정해 이를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김나지움에서 학생들에 대해 구 동독에 대해 또 통일 과정의 결과 체험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이 전달되어야 한다. 수업은 통상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며 교수학적으로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 들에 근거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의견 그리고 경험을 관련지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schen in Deutschland, in Europa und der Welt von Bedeutung sind.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rhalten somit die Möglichkeit, sich mit gegenwärtigen Entwicklungen und Streitfragen auseinanderzusetzen, Folgen von Entscheidungen zu analysieren und Möglichkeiten der Zukunftsgestaltung zu diskutieren. Bei der Frage nach Ursachen und Entwicklung von Problemen ist es oft notwendig, auf den historischen Aspekt zurückzugreifen. Dieser kann jedoch nur einer von mehreren (z.B. den rechtlichen, politischen, ökonomischen, sozialen) Aspekten zur Erklärung eines Problems sein.

[...]

*Quelle:*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 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 - Sozialkunde, Magdeburg 1991.

### 10.13 *Sozialkunde in Thüringen*

#### *Aus den Vorläufigen Lehrplanhinweisen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1991)*

[...]

Die Erziehungsarbeit in der Schule ist an die i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im Vorläufigen Bildungsgesetz des Landes Thüringen verankerten Grundwerte menschlichen Zusammenlebens gebunden.

Das Fach Sozialkunde führt in die gesellschaftlichen Lebensbedingungen des Menschen ein. In seinem Mittelpunkt steht die Gesellschaft, in der wir uns bewegen. Das Fach hat die Aufgabe, den raschen gesellschaftlichen Wandel sichtbar zu machen und die zunehmende Komplexität unserer Welt begreifen zu helfen. Es fördert die Erkenntnis, daß das Leben des Menschen erheblich von Politik bestimmt wird. Deshalb gehört ein Verstehen von Politik auch zum Verstehen und bewußten Gestalten des eigenen Lebens.

Politische Bildung schafft Voraussetzungen für eine gelebte Demokratie. Die freiheitlich Demokratie bedarf des durch die Schule gebildeten und informierten Bürgers, der es gelernt hat, politisch rational und verantwortlich zu urteilen und zu handeln. Daraus ergeben sich für den Sozialkundeunterricht folgende wichtige Zielstellungen:

1. Als Grundlage für eine Auseinandersetzung mit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Fragestellungen müssen den Schülern fundierte Kenntnisse vermittelt werden.
2. Das Erfassen von Zusammenhängen aus den Bereichen Politik, Wirtschaft, Recht, Ökologie und Geschichte stellt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sachgerechte Problemanalysen dar.

3. Es werden Haltungen aufgebaut, die für politische Beteiligung in der Demokratie bedeutsam sind.

Der Sozialkundeunterricht darf niemals indoktrinieren, aber auch nicht wertneutral sein. Das Fach wird in der Bildung und Erziehung der Schüler von den anderen Unterrichtsfächern unterstützt, stellt aber zugleich den wichtigen Mittler zwischen diesen dar.

Im Fach Sozialkunde sollen die Schüler lernen, soziales und politisches Geschehen zu verstehen, einen begründeten politischen Standpunkt zu gewinnen und ihn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zu vertreten. Sie sollen Handlungsformen, Chancen und Grenzen politischer Beteiligung kennenlernen und werden zugleich auf die verantwortungsbewußte Wahrnehmung ihrer Rechte und Pflichten als erwachsene, mündige Glieder der Gesellschaft und als Staatsbürger vorbereitet. Der Unterricht im Fach muß die Wertvorstellungen des Grundgesetzes vermitteln. Das Grundgesetz enthält aber keine konkreten Anweisungen für deren Umsetzung und Gestaltung in der Gesellschaft. Es ermöglicht vielmehr den Pluralismus politischer Überzeugungen und setzt ihm einen Rahmen. Der Unterricht muß folglich kontroverse Auffassungen zur Kenntnis bringen. Die Schüler sollen Probleme von mehreren Seiten betrachten, bevor sie zu eigenen Entscheidungen gelangen.

Eine unverzichtbare Aufgabe des Sozialkundeunterrichts ist das Beschäftigen und Auseinandersetzen mit den Entwicklungen und Strukturen der ehemaligen DDR. Insbesondere in der gymnasialen Stufe soll den Schülern geholfen werden, ein sachliches Verhältnis zu der von ihnen selbst bewußt erlebten und zum Teil noch erlebbaren Geschichte des Zusammenbruchs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zu finden, zumal sie noch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hinweg mit den Folgen dieses Systems und seines Zusammenbruchs konfrontiert sein werden.

### Lernziele

Die Schüler sollen die Einsicht gewinnen, daß man sich sachkundig machen muß, um rationell urteilen und entscheiden zu können. Durch grundlegendes Wissen und die Erziehung zum selbständigen, sachgerechten Urteilen wird die Manipulationsgefahr im politischen Bereich verringert. Gleichzeitig soll bei den jungen Staatsbürgern durch die Einsicht in die Gestaltbarkeit von Politik die Bereitschaft zu verantwortungsvoller Mitwirkung am gesellschaftlichen Leben gefördert werden. Das Fach Sozialkunde will die Befähigung des einzelnen zur Wahrnehmung von Rechten sowie zur Übernahme von Pflichten in der Gesellschaft fördern. Der Schüler soll zur Erkenntnis geführt werden, daß das eigene Verhalten von sozialer Verantwortung geprägt wird.

Der Sozialkundeunterricht soll zu der Einsicht führen, daß eine freiheitlich-demokratische Verfassungsordnung auf der Achtung der Menschenwürde als oberstem Staatsziel beruht. Hierbei soll der Schüler erzogen werden zur Demokratie, zur Achtung der Würde des Menschen, zum verantwortlichen Gebrauch der Freiheit, zur Bereitschaft, den Frieden zu sichern, zur Völkerverständigung unter dem besonderen Aspekt des geeinten Europas. Die Schüler sollen weiterhin erzogen werden zur Urteilsbildung, Selbstbehauptung und kritischen Orientierung, aber auch zum Eintreten für das eigene Recht und die Bereitschaft für eine rechtlich geregelte Konfliktlösung.

Der Unterricht soll zur Erkenntnis führen, daß Chancen und Spielräume, die man selber in Anspruch nimmt, grundsätzlich auch allen anderen einzuräumen sind. Durch Problemorientiertheit und offene Konflikte soll der Unterricht aktives Engagement fördern.

#### Methodisch-didaktischer Bereich

Der Sozialkundeunterricht geht in der Regel vom konkreten Fall, vom lebensnahen, didaktisch ergiebigen Beispiel aus und führt zum Erfassen der jeweiligen politischen Fragestellungen. Er bezieht Vorwissen, Meinungen und Erfahrungen der Schüler mit ein und leitet sie zu selbständiger Informationssuche an.

Sozialkundeunterricht muß lebendige aktuelle Beispiele aufgreifen, um in ihnen Kernprobleme der Politik zu behandeln. In allen Jahrgangsstufen spielt die Aktualität neben der systematischen Darlegung eine wesentliche Rolle.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m Zeitgeschehen kommt den Interessen der Schüler entgegen. Dadurch werden Handlungsspielräume und Sachzwänge bei politischen Entscheidungen verdeutlicht. Politischer Unterricht sollte soviel Institutionskunde wie nötig und soviel praktischer Anschauungsunterricht wie möglich sein.

Besonders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Streitfragen kommt es darauf an, unterschiedliche Standpunkte darzulegen, zwischen Fakten und Meinungen zu unterscheiden, Lösungsvarianten anzubieten und diese gründlich zu analysieren.

Die vorläufigen Lehrplanhinweise sind so angelegt, daß ihre Stoffe in 28 Unterrichtswochen bewältigt werden können. Die über den genannten zeitlichen Rahmen hinausgehenden Stunden stehen dem Lehrer und seinen Schülern z.B. zur Aktualisierung, für die Wissenssicherung und die Vertiefung zur Verfügung. Die zu einem Thema angegebenen Stundenzahlen sind als Vorschläge zu werten. Der Lehrer sollte sie nach eigenem Ermessen unter Beachtung der Lernsituation in der Schulklasse entsprechend variieren. Die Inhalte der in den Lehrplanhinweisen ausgewiesenen Begriffe sollte der Schüler sicher beherrschen. In den Klassen 9 und 10 der Regelschule und den Klassen 10-12 des Gymnasiums sollte der Einstieg ins Fach über die "Wertordnung des Grundgesetzes" erfolgen. Hinweise hierzu finden sich in der Klassenstufe 8. In den überwiegenden Stunden des Faches Sozialkunde ist die Arbeit mit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entbehrlich.

[...]

*Quelle:*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문서 번호 27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1 년 [발췌]

1991 년 4 월

담당자 / 기관: 연방 교육·학술부 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내용:

이 문서는 1991 년도 연방정부가 발표한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1990 년도 직업교육자리 현황: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자리의 현황은 1949 년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수치로, 직업교육자리의 공급이 수요를 약 18 퍼센트 초과하였다.

- 직업교육정책의 조건 및 중점 사항

-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

- 1990 년도 신연방주들 및 동 베를린에서의 직업교육자리 현황

- 1990 년도 신연방주들 및 동 베를린에서의 사업체 내 직업교육자리 현황

- 신연방주들 및 구연방주들에서 학교중퇴자의 직업교육현황

- 신연방주들 및 동 베를린에서의 사업체 외부 직업교육기관의 변화

- 신연방주들 및 동 베를린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청소년의 직업교육장려

- 노동진흥법(AFG)에 따라 지원되는 직업 계속교육 (추가교육, 전환교육 및 사업체 적응교육)

- 신연방주들 및 동 베를린에서 직업교육장려

- 구연방주들에서의 직업교육보조금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1.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28.

Berufsbildungsbericht 1991. Bad Honnef: K.H. Bock Verlag



**GRUNDLAGEN  
PERSPEKTIVEN**

**BILDUNG**

**WISSENSCHAFT**

**Berufsbildungsbericht**

**1991**

**28**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28

# **Berufsbildungsbericht 1991**

Bonn 1991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iese Druckschrift wird im Rahmen der Öffentlichkeitsarbeit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erausgegeben. Sie darf weder von Parteien noch von Wahlbewerbern oder Wahlhelfern während eines Wahlkampfes zum Zwecke der Wahlwerbung verwendet werden. Das gilt für Landtags-, Bundestags- und Kommunalwahlen. Mißbräuchlich ist insbesondere die Verteilung auf Wahlveranstaltungen, an Informationsständen der Parteien sowie das Einlegen, Aufdrucken oder Aufkleben parteipolitischer Informationen oder Werbemittel. Untersagt ist gleichfalls die Weitergabe an Dritte zum Zwecke der Wahlwerbung.

Unabhängig davon, wann, auf welchem Weg und in welcher Anzahl diese Schrift dem Empfänger zugegangen ist, darf sie auch ohne zeitlichen Bezug zu einer bevorstehenden Wahl nicht in einer Weise verwendet werden, die als Parteinahme der Bundesregierung zugunsten einzelner politischer Gruppen verstanden werden könnte.

Die Deutsche Bibliothek — CIP-Einheitsaufnahme

**Berufsbildungsbericht...** / hrsg.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Bad Honnef : Bock

Bis 1981 im Verl. Gersbach, München  
ISSN 0344-578X

1991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28)

ISBN 3-87066-695-1

NE: GT

Vertrieb:

K. H. Bock Verlag, 5340 Bad Honnef 1

ISBN: 3-87066-695-1

DM 14,80

Druck: Druckpartner Moser, 5308 Rheinbach (April 1991)

# Gliederung

Seite

<b>Teil I</b>	<b>Berufsbildung in Deutschland: Fortentwicklung und Kontinuität — Richtung Europa</b> .....	1
<b>1.</b>	<b>Rahmenbedingungen und Schwerpunkte der Berufsbildungspolitik</b> .....	1
1.1	Ausbildungsplatzsituation 1990 .....	2
1.1.1	Ausbildungsplatzsituation 1990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2
1.1.2	Ausbildungssituation 1990 in den neuen Ländern .....	2
1.2.	Entwicklung der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	3
1.3	Herausforderung Europa .....	5
1.4	Weiterentwicklung des dualen Systems .....	6
1.5	Weiterbildung als Schwerpunktaufgabe der Zukunft .....	8
1.6	Begabtenförder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	10
1.7	Verbesserung der Berufsperspektiven für Frauen durch berufliche Bildung ..	10
<b>2.</b>	<b>Nachfrage und Angebot bei Ausbildungsplätzen</b> .....	11
2.1	Bisherige Entwicklung .....	11
2.1.1	Nachfrage .....	12
2.1.2	Ausbildungsstellenangebot und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	12
2.1.3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nd unbesetzte Ausbildungsstellen .....	13
2.2.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von Angebot und Nachfrage .....	13
2.2.1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1 .....	13
2.2.2	Ausbildungsplatznachfrage in den kommenden Jahren .....	14
2.2.3	Ausbildungsplatzangebot .....	14
	<b>Beschluß der Bundesregierung zum Berufsbildungsbericht 1991 vom 19. März 1991</b> .....	15

# Gliederung

	Seite
<b>Teil II Informationen und Daten zur beruflichen Bildung</b> .....	17
<b>1. Quantitativ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b> .....	17
1.1 Ergänzende Daten zur Ausbildungsstellenbilanz 1989 in den elf alten Bundesländern .....	17
1.2 Ausbildungsstellensituation 199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24
1.3 Bestands- und Strukturdaten der betrieblichen und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bis 1989 .....	26
1.3.1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	26
1.3.1.1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26
1.3.1.2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33
1.3.2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	35
1.3.2.1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35
1.3.2.2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in der ehemaligen DDR .....	39
1.3.3 Die Altersstruktur der Auszubildenden .....	40
1.3.3.1 Die Altersstruktur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40
1.3.3.2 Die Altersstruktur der Auszubildenden in der ehemaligen DDR .....	41
1.3.4 Vorzeitige Lösung von Ausbildungsverträgen .....	41
1.3.4.1 Vorzeitige Lösung von Ausbildungsverträ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41
1.3.4.2 Vorzeitige Lösung von Ausbildungsverträgen in der ehemaligen DDR .....	43
1.3.5 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	44
1.3.5.1 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44
1.3.5.2 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	46
1.3.6 Teilzeitschülerbefragung 1989/90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46
1.3.7 Schulische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is 1989 .....	49
1.3.7.1 Berufliche Vollzeitschulen — Berufsvorbereitungsjahr, Berufsgrundbildungsjahr, Berufsfachschule .....	49
1.3.7.2 Ausbildung im Gesundheitswesen .....	51
1.3.7.3 Ausbildungsleistun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	51
1.3.8 Schulische Berufsausbildung und Fachschulwesen in der ehemaligen DDR .	51
1.3.8.1 Berufsausbildung mit Abitur .....	51
1.3.8.2 Fachschulen .....	53
1.4 Ausbildungsverhalten von Schulabgängern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	56
1.5 Vorausschätzung der Nachfrage 1991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	58



2.	<b>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b> .....	59
3.	<b>Berufsausbildung und Erwerbstätigkeit</b> .....	69
3.1	Bildung, Ausbildung und Berufseintritt im Zeitverlauf — Erste Ergebnisse einer Bildungsgesamtrechnung (alte Bundesländer) .....	69
3.2	Absolvente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in Metall-, Elektro- und kaufmännisch-verwaltenden Beruf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70
3.3	Abiturienten in der Berufsausbildung (altes Bundesgebiet) .....	71
3.4	Übergang nach Ausbildungsabschluß in der ehemaligen DDR .....	73
3.4.1	Übergang nach Abschluß der Facharbeiterausbildung .....	73
3.4.2	Übergang nach Abschluß der Fachschulausbildung .....	73
3.5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in ausgewählten Beruf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74
3.5.1	Frauen und Männer in qualifizierten Angestelltenberufen im Vergleich .....	74
3.5.2	Berufsverläufe von Frauen in technikorientierten Berufen in Niedersachsen und Berlin (West) .....	76
3.6	Industriemeister und Techniker — Ein Vergleich von Ausbildungswegen und Tätigkeitsschwerpunkt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77
3.7	Qualifikations- und Berufsfindungsprobleme von Übersiedlern aus der ehemaligen DDR und Zuwanderer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79
4.	<b>Inhaltliche Gestaltung und Strukturfragen der Berufsausbildung</b> .....	81
4.1	Neuordnung von Ausbildungsberufen .....	81
4.1.1	Stand der Neuordnung von Ausbildungsberufen .....	81
4.1.2	Neuordnung der kaufmännischen und verwaltenden Ausbildungsberufe .....	81
4.1.2.1	Neuordnungsarbeiten für fortgeltende Regelungen gemäß § 108 BBiG .....	81
4.1.2.2	Überprüfungen von Ausbildungsordnungen, die in den 70er Jahren erlassen wurden .....	83
4.2	Zur Angleichung der Berufsausbildung der neuen Bundesländer und Berlin (Ost) an die Ausbildungsordnungen des alten Bundesgebietes .....	83
4.3	Betriebliche Ausbildungsgestaltung in ausgewählten Berufen des Handwerks und von Industrie und Handel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84
4.4	Gestaltung der berufspraktischen Aus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	87
4.5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	87
4.5.1	Auswirkungen der neuen Technologien auf die Strukturen d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des Handwerks .....	88
4.5.2	Entwicklung überbetrieblicher Au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89
4.6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	90
4.6.1	Berufsbildungsforschung an den Hochschu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Zielsetzungen und Vorschläge einer Denkschrif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	90
4.6.2	Zusammenarbeit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mit anderen Institutionen auf dem Gebiet der Berufsbildungsforschung .....	91

<b>5.</b>	<b>Personengruppen, die besonderer Förderung bedürfen</b> .....	92
5.1	Entwicklung berufsvorbereitender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	92
5.2	Förderung der Berufsbildung Behinderter .....	93
5.2.1	Erstmalige berufliche Eingliederung von Behinderten .....	93
5.2.2	Berufliche Wiedereingliederung von Behinderten im alten Bundesgebiet .....	94
5.3	Förder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	97
5.3.1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von benachteiligten Auszubildenden nach §40c AFG .....	97
5.3.2	Modellvorhaben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lernbeeinträchtigter Jugendlicher in Handwerksbetrieben .....	99
5.4	Förderung und Berufsausbild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100
5.5	Strukturdaten über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ohne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01
5.6	Begabtenförder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	102
5.6.1	Begabtenförder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der ehemaligen DDR .....	103
5.7	Berufsausbildung ausländischer Jugendlich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03
5.7.1	Daten zur betrieblichen und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	103
5.7.2	Repräsentativuntersuchung zur Ausbildungssituation ausländischer Jugendlicher im alten Bundesgebiet .....	109
5.7.3	Förderung der beruflichen Eingliederung ausländischer Jugendlicher und junger Erwachsen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11
5.7.3.1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in der Arbeitsmarktregion Köln .....	111
5.7.3.2	Ausländische Selbständige bilden aus .....	111
5.7.3.3	Nachqualifizierung und Umschulung arbeitsloser Ausländer — Verlauf und Ergebnisse zweier Modellvorhaben .....	112
5.7.3.4	Nachqualifizierungsmodellvorhaben für Ausländerinnen .....	113
5.8	Berufliche Eingliederung von Aussiedler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13
5.9	Langzeitarbeitslose .....	115
<b>6.</b>	<b>Berufliche Weiterbildung</b> .....	116
6.1	Konzertierte Aktion Weiterbildung .....	116
6.1.1	Empfehlungen der Konzertierten Aktion Weiterbildung .....	116
6.1.2	Deutsch-deutsch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	117
6.2	Zur Entwicklung der Ordn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118
6.3	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118
6.3.1	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m alten Bundesgebiet .....	118
6.3.2	Fortbildungsprüfung zum Industriemeister .....	122

6.4	Entwicklung der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geförderten beruflichen Weiterbildung (Fortbildung, Umschulung und betriebliche Einarbeitung) .....	122
6.4.1	Altes Bundesgebiet .....	122
6.4.2	Neue Bundesländer .....	123
6.5	System der Weiterbildung und neue Anforder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124
6.5.1	Strukturdaten (Teilnehmer, Träger) .....	124
6.5.2	Ordn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124
6.5.3	Weiterbildungsbedarf infolge des Strukturwandels .....	125
6.5.4	Weiterbildungsbedarf bei besonderen Personengruppen .....	126
6.5.5	Entwicklung der Ausbildung von Meistern .....	127
6.6	Maßnahmenswerpunkte und Projekte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n Frauen .....	127
6.6.1	Förderschwerpunkt „Weiterbildung während der Familienphase und beim beruflichen Wiedereinstieg“ .....	127
6.6.2	Modellversuchsprogramm zur Nachqualifizierung .....	129
6.6.3	Verbesserung der Weiterbildung von Frauen im Rahmen der EG .....	129
6.6.4	Weiterbildung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129
6.7	Energie und Umwelt .....	130
6.7.1	Aus- und Fortbildung für eine verstärkte Nutzung der rationellen Energieverwendung und erneuerbarer Energien .....	130
6.7.2	Weiterbildungsbedarf im Arbeitsfeld Energie und Umwelt .....	130
6.8	Fernunterricht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m alten Bundesgebiet .....	131
6.8.1	Ergebnisse der freiwilligen Fernunterrichtsstatistik .....	131
6.8.2	Angebote und Anbieter im Fernunterricht .....	132
6.8.3	Fernunterricht und Direktunterricht im Vergleich .....	135
6.9	Kaufmännische Fortbildung .....	135
6.10	Abschlußbezogene Maßnahmen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n Langzeitarbeitslosen .....	136
6.11	Weiterbildungsdatenbank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37
6.12	Stand und Vorschläge zur Intensivierung der betrieblichen Weiterbildungsforschung .....	139
6.13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sowie der Arbeitsbedingungen bei der Pflege und Betreuung von Alten, Kranken und Behinderten .....	139
6.13.1	Programm „Arbeit und Technik“ .....	140
6.13.2	Weiterbildungskonzept zur Verbesserung des Qualifizierungsstandes in der Hauspflege .....	140

<b>7.</b>	<b>Personal in der beruflichen Bildung</b> .....	140
7.1	Ausbildungspersonal .....	140
7.1.1	Zahlenmäßige Entwicklung des Ausbildungsperson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40
7.1.2	Lehrkräfte für den theoretischen und berufspraktischen Unterricht in beruflichen Schulen der ehemaligen DDR .....	141
7.2	Ausbildung der Ausbilder: Überarbeitung des Rahmenstoffplans .....	143
7.3	Weiterbildung von Ausbildern .....	144
7.3.1	Studie zur Weiterbildung betrieblicher Ausbilder .....	144
7.3.2	Qualifizierungskonzepte für nebenberufliche Ausbilder in der Industrie .....	145
7.4	Qualifizierung des Ausbildungspersonals für den Umweltschutz .....	146
7.5	Seminarkonzepte zur Ausbilderförderung .....	147
7.5.1	Seminarkonzept „Motivation in der Ausbildung zu lebenslangem Lernen“ ..	148
7.5.2	Seminarkonzept „Lernbeeinträchtigte in den neu geordneten Metallberufen“ .....	148
7.6	Weiterbildung des Ausbildungspersonals in der ehemaligen DDR .....	148
7.7	Ausbildungsberat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49
<b>8.</b>	<b>Kosten, Finanzierung und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b> .....	151
8.1	Gesamt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Bildung .....	151
8.1.1	Gesamt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Ländern .....	151
8.2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m einzelnen .....	152
8.2.1	Förderung der Auszubildenden .....	152
8.2.1.1	Auszubildende i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	152
8.2.1.2	Jugendliche in der Vollzeitausbildung .....	152
8.2.2	Förderung der Ausbildungsbetriebe .....	152
8.2.2.1	Bundesförderung .....	152
8.2.2.2	Länderförderung .....	153
8.2.3	Regionalförderung .....	153
8.2.4	Weitere Maßnahmen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	153
8.3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in Berlin (Ost) .....	154
8.4	Tarifvertragliche Finanzierungsregelungen in der Wirtschaf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55
8.5	Ausbildungsvergütungen .....	155
8.5.1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55
8.5.2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156
8.6	Stand der Kostenforschung auf dem Gebiet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	157

<b>9.</b>	<b>Internationale Fragen der Berufsbildung</b> .....	157
9.1	Zusammenarbeit in der EG .....	157
9.1.1	Entsprechungen der beruflichen Befähigungsnachweise .....	158
9.1.2	Anerkennung von beruflichen Befähigungsnachweisen .....	158
9.1.3	Übergang Jugendlicher ins Erwerbsleben — Das EG-Aktionsprogramm PETRA .....	159
9.1.4	Förderung von Innovationen i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EUROTECNET) .....	160
9.1.5	Programm zur Verbesserung der Fremdsprachenkenntnisse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LINGUA) .....	160
9.1.6	Programm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FORCE) .....	160
9.1.7	Programm zur Förderung der grenzüberschreitenden Zusammenarbeit von Hochschule und Wirtschaft im Technologiebereich (COMETT) .....	161
9.1.8	Europäischer Sozialfonds (ESF) .....	161
9.1.9	Berufsberatung und Europäischer Binnenmarkt .....	162
9.2	Multilaterale Zusammenarbeit in der beruflichen Bildung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	162
9.2.1	UNESCO .....	162
9.2.2	OECD .....	163
9.2.3	Internationale Fragen der Berufsausbildung der ehemaligen DDR (einschl.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im Ausland, Austausch- und Stipendienprogramme) .....	163
9.3	Ausgewählte Beispiele bilateraler Zusammenarbeit .....	164
9.4	Austausch- und Stipendienprogramme,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m Ausland .....	165
9.5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 Aktivität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	166
<b>10.</b>	<b>Anhang</b> .....	167
10.1	Daten der Berufsbildungsstatistik .....	167
10.2	Vorbereitung des Berufsbildungsberichtes 1991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 a. ....	168
10.3	Tabellenverzeichnis, Tabellen .....	170
10.4	Quellenverzeichnis .....	208
10.4.1	Gesetze, Verordnungen, Richtlinien .....	208
10.4.2	Literaturverzeichnis .....	209
<b>11.</b>	<b>Stichwortverzeichnis</b> .....	212



## Verzeichnis der Übersichten

	Seite
Übersicht 1: Versorgung der Jugendlichen mit Ausbildungsplätz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9 und 1990 .....	17
Übersicht 2: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0, 1987 bis 1990 .....	18
Übersicht 3: Vergleich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im alten Bundesgebiet 1989/1990 in stark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	19
Übersicht 4: Gemeldete Berufsausbildungsstellen und gemeldete Bewerber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90 ..	19
Übersicht 5: Unbesetzte Berufsausbildungsstellen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8 bis 1990 .....	21
Übersicht 6: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m Ausbildungsplätze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8 bis 1990	21
Übersicht 7: Gemeldete Berufsausbildungsstellen und gemeldete Bewerber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Beruf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bis 1990 .....	22
Übersicht 8: Unbesetzte Berufsausbildungsstellen und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Beruf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bis 1990 .....	22
Übersicht 9: Gemeldete Bewerber um Berufsausbildungsstellen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Art des Schulabschlusses und nach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88 bis 1990 .....	23
Übersicht 10: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m Berufsausbildungsstellen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Art des Schulabschlusses und nach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88 bis 1990 .....	24
Übersicht 11: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die für die Aufnahme in eine Berufsausbildungsstelle 1990 in Frage kamen	24
Übersicht 12: Nicht vermittelte Bewerb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25
Übersicht 13: Berufsausbildungsstellen und Anzahl der unbesetzten Berufsausbildungs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25
Übersicht 14: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zum Ausbildungsbeginn 199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26
Übersicht 15: Auszubildende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3 bis 1989 .....	28
Übersicht 16: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an allen Auszubildend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3 bis 1989 in Prozent .....	29
Übersicht 17: Auszubildende in den fünf, zehn und fünf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nach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75 bis 1989 in Prozent .....	30
Übersicht 18: Die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1989 für männliche und weibliche Auszubildende im alten Bundesgebiet .....	30
Übersicht 19: Weibliche Auszubildende in ausgewählten Berufsgruppierungen im alten Bundesgebiet 1977, 1988 und 1989 .....	31
Übersicht 20: Auszubildende in den neuen industriellen Metall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	31
Übersicht 21: Auszubildende in den neuen industriellen Elektro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	31
Übersicht 22: Auszubildende in den neuen und „alten“ Ausbildungsberufen in den Bereichen Metall, Elektro und Einzelhandel im alten Bundesgebiet 1986 bis 1989 .....	32

Übersicht 23:	Auszubildende nach Betriebsgrößenklassen im alten Bundesgebiet 1970 und 1987 .....	33
Übersicht 24:	Auszubildende insgesamt und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1974 bis 1989 .....	34
Übersicht 25: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an neuen Verträgen in den Ausbildungsbere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1974 bis 1989 in Prozent .....	34
Übersicht 26:	Auszubildende in den fünf, zehn und fünf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nach Geschlecht 1986 und 1989 (oh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in Prozent .....	34
Übersicht 27:	Die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nach den Neuverträgen 1989 für männliche und weibliche Auszubildende (oh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35
Übersicht 28:	Aufnahme von Schulabgängern der 8. Klasse nach der Rangfolge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Beru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1989 .....	35
Übersicht 29: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in Prozent .....	36
Übersicht 30:	Auszubildende mit Hochschulreife nach Rangfolge 1989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	37
Übersicht 31:	Auszubildende mit Realschul- oder vergleichbarem Abschluß nach Rangfolge 1989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	37
Übersicht 32:	Auszubildende mit Hauptschulabschluß nach Rangfolge 1989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	38
Übersicht 33:	Auszubildende ohne Hauptschulabschluß nach Rangfolge 1989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	38
Übersicht 34: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8 und 1989 in Prozent .....	39
Übersicht 35:	Auszubildende nach ihrer schulischen Vorbildung und Geschlecht in der ehemaligen DDR 1986 bis 1989 .....	40
Übersicht 36:	Bewerber und nicht vermittelte Bewerber nach ihrer schulischen Vor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1990 .....	40
Übersicht 37:	Berufsschüler nach Alter und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70 bis 1989 .....	40
Übersicht 38:	Vorzeitig gelöste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9 bis 1989 .....	41
Übersicht 39:	Anteil der vorzeitig gelösten Ausbildungsverträge an den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9 bis 1989 in Prozent .....	42
Übersicht 40:	Anteil der vorzeitig gelösten Ausbildungsverträge an den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n nach ausgewählten Ausbildungs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in Prozent ...	42
Übersicht 41:	Auszubildende mit und ohne Vertragslösung aus dem Lehrbeginn-jahrgang 1989 im alten Bundesgebiet nach schulischen Abschlüssen und Geschlecht in Prozent .....	43
Übersicht 42:	Teilnehmer an Abschluß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und Prüfungserfolg nach Ausbildungsbereichen und ausgewählten Ausbildungs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9 .....	45



Übersicht 43:	Externe Prüfungsteilnehmer im Ausbildungsbereich von Industrie und Handel im alten Bundesgebiet 1978 bis 1989 .....	46
Übersicht 44:	Ergebnisse der Facharbeiterprüfungen in der ehemaligen DDR 1989 .....	47
Übersicht 45:	Auszubildende verschiedener Schulabschlüsse mit Ausbildungsbeginn 1989 im alten Bundesgebiet nach dem Abgangsjahr aus allgemeinbildenden Schulen, Art des Abschlusses und Geschlecht in Prozent .....	48
Übersicht 46:	Auszubildende nach Geschlecht und ausgewählten Beruf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7 bis 1989 in Prozent .....	49
Übersicht 47:	Schüler in Berufsfachschulen und Anteil der Berufsfachschülerinn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76, 1988 und 1989 .....	50
Übersicht 48:	Ausgewählte Facharbeiterausbildungen der Absolventen der Berufsausbildung mit Abitur in der ehemaligen DDR 1986 bis 1989 .....	52
Übersicht 49:	Hochschulstudienzulassungen der Absolventen der Berufsausbildung mit Abitur nach Fachrichtungen in der ehemaligen DDR 1989 .....	52
Übersicht 50:	Anzahl der Fachschulen, hauptamtlichen Außenstellen und Studierenden nach Fachschulgruppen in der ehemaligen DDR 1989 .....	54
Übersicht 51:	Angestrebte Übergänge nach Schulende in Abhängigkeit vom schulischen Abschluß und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90 in Prozent .....	57
Übersicht 52:	Angestrebte Berufe nach schulischem Abschluß und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90 .....	58
Übersicht 53:	Berufsstruktur der BBiG-Beru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Prozent .....	60
Übersicht 54:	Veränderungen der Angebots-Nachfrage-Relation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gegenüber dem Vorjahr in Prozent .....	61
Übersicht 55:	Westdeutsche Arbeitsamtsbezirke mit Hinweisen auf Versorgungsleistungen für ostdeutsche Randbezirke .....	61
Übersicht 56:	Zahl der Arbeitsamtsbezirke nach Angebots-Nachfrage-Relation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9 und 1990 .....	62
Übersicht 57:	Gesamt- und berufsspezifische Angebots-Nachfrage-Relationen sowie Gesamt-Arbeitslosenquoten nach Gebietsgruppen im alten Bundesgebiet 1989/1990 (gemittelt) .....	62
Übersicht 58:	Übergangsquoten im alten Bundesgebiet 1975 und 1985 in Prozent .....	69
Übersicht 59:	Einsatz von Datenverarbeitung bei der aktuellen Berufstätigkeit nach Betriebsgröße, Berufsgruppen und ausgewählten 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in Prozent .....	71
Übersicht 60:	Bedeutung von Weiterbildung für den Berufserfolg im alten Bundesgebiet in Prozent .....	71
Übersicht 61:	Verbleib von Studienberechtigten im alten Bundesgebiet mit 1984 abgeschlossener betrieblicher Ausbildung zu verschiedenen Zeitpunkten in Prozent .....	72
Übersicht 62:	Berufliche Position qualifizierter Frauen und Männer im alten Bundesgebiet in Prozent .....	75
Übersicht 63:	Monatliches Bruttoeinkommen qualifizierter Frauen und Männer im alten Bundesgebiet in Prozent .....	75
Übersicht 64:	Teilnahme qualifizierter Frauen und Männer an Maßnahm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5/86 in Prozent .....	76
Übersicht 65:	Teilnehmer an Meisterprüfungen und Schüler an Fachschulen in technischen 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8 .....	78
Übersicht 66:	Bildungsmerkmale von Industriemeistern und Technikern im alten Bundesgebiet in Prozent .....	78

Übersicht 67:	Zahl der Teilnehmer a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Berufsberatung 1989 und 1990 .....	92
Übersicht 68:	Zahl der Teilnehmer a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beratung 1989 und 1990 .....	93
Übersicht 69:	Bestand an Rehabilitanden in berufsfördernden Bildungsmaßnahmen nach Art der Bildungsmaßnahme im alten Bundesgebiet/Ende Dezember 1983 bis 1989 .....	95
Übersicht 70:	Bestand an Rehabilitanden in berufsfördernden Bildungsmaßnahmen nach Lernorten und Art der Bildungsmaßnahme im alten Bundesgebiet/Ende Dezember 1986 bis 1989 .....	95
Übersicht 71:	Austritte von Rehabilitanden aus Fortbildungen nach Lernorten und Ergebnis der Maßnahme 1989 im alten Bundesgebiet, Meldende Stelle: Reha/SB-Stelle .....	96
Übersicht 72:	Austritte von Rehabilitanden aus Umschulungen nach Lernorten und Ergebnis der Maßnahme 1989 im alten Bundesgebiet, Meldende Stelle: Reha/B-Stelle .....	96
Übersicht 73:	Bestand an Rehabilitanden in berufsfördernden Bildungsmaßnahmen — häufigste Arten der Behinderung — im alten Bundesgebiet/Ende Dezember 1987 bis 1989 (in Klammern absolute Anzahl der Fälle) .....	97
Übersicht 74: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von benachteiligten Auszubildenden im alten Bundesgebiet 1983 bis 1989 .....	98
Übersicht 75:	Benachteiligtenförd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bewilligte Plätze nach Ländern und Maßnahmenarten differenziert, Stand 24. September 1990 .....	100
Übersicht 76:	Ausländische Schulabgänger nach Art des Schulabschlusses im alten Bundesgebiet 1983 bis 1989 .....	105
Übersicht 77:	Ausländische Auszubildend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ach Staatsangehörigkeit und Ausbildungsbereichen 1987 bis 1989 .....	106
Übersicht 78:	Ausbildungsbeteiligung ausländischer Jugendlicher im alten Bundesgebiet 1985 bis 1989 .....	107
Übersicht 79:	Ausbildungsberufe mit hohen Anteilen an ausländischen Auszubildenden im alten Bundesgebiet am 31. Dezember 1989 .....	107
Übersicht 80:	Ausländische Schüler an beruflichen Schulen im alten Bundesgebiet 1989 .....	108
Übersicht 81:	Schulbesuch von ausländischen Jugendl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9 in Prozent .....	109
Übersicht 82:	Schulabschluß von ausländischen Jugendl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9 in Prozent .....	109
Übersicht 83:	Gründe von ausländischen Jugendlichen im alten Bundesgebiet für den Ausbildungsverzicht 1989 in Prozent .....	109
Übersicht 84:	Gründe von ausländischen Jugendlichen im alten Bundesgebiet für den Abbruch der Berufsausbildung 1989 in Prozent .....	110
Übersicht 85:	Zufriedenheit von ausländischen Jugendlichen im alten Bundesgebiet mit der Ausbildung im Betrieb 1989 in Prozent .....	110
Übersicht 86:	Teilnehmer an Weiterbildungsprüfungen und Anteil der bestandenen Prüfungen im Bereich Industrie und Handel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9 .....	119
Übersicht 87:	Teilnehmer an Meisterprüfungen im Handwerk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9 .....	120
Übersicht 88:	Anteil der weiblichen Teilnehmer an Meisterprüfungen nach Handwerksgruppen und durchschnittliche Erfolgsquote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9 in Prozent .....	120
Übersicht 89:	Teilnehmer an Fortbildungsprüfungen im Handwerk des alten Bundesgebietes 1989 .....	121

Übersicht 90:	Teilnehmer an AFG-geförderten Maßnahmen zu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mit bestandener Abschlußprüfung nach Prüfungsart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9 .....	122
Übersicht 91:	Teilnehmer an Fernlehrgängen nach Themenbereichen, Geschlecht und Alter im alten Bundesgebiet 1989 .....	132
Übersicht 92:	Fernlehrgänge im alten Bundesgebiet nach Art der Abschlußmöglichkeiten 1990 .....	133
Übersicht 93:	Fernlehrgänge im alten Bundesgebiet nach Art der finanziellen Förderung 1990 .....	134
Übersicht 94:	Bestandene Ausbilderprüfungen sowie Befreiungen von der Ausbilderprüfung im Ausbildungsbereich „Industrie und Handel“ im alten Bundesgebiet 1978 bis 1989 .....	141
Übersicht 95:	Bestandene Meisterprüfung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8 bis 1989 .....	142
Übersicht 96:	Universitäten und Fachrichtungen zur Ausbildung von Berufsschullehrern in der ehemaligen DDR .....	142
Übersicht 97:	Einrichtungen, Fachrichtungen und Absolventenzahlen der Ingenieur- bzw. Ökonom-Pädagogen-Aus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1988 und 1989 .....	143
Übersicht 98:	Anzahl der Ausbildungsberater im alten Bundesgebiet nach Ausbildungsbereichen und Art der Tätigkeit 1987 bis 1989 .....	150
Übersicht 99:	Besuche der hauptberuflich tätigen Ausbildungsberater in Industrie und Handel sowie Handwerk im alten Bundesgebiet 1987 bis 1989 .....	150
Übersicht 100:	Haushaltsansätze (1990)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für außerschulische Berufsbildungsmaßnahmen .....	151
Übersicht 101:	Ausgaben des Staates der ehemaligen DDR 1989 in Mio. Mark .....	152
Übersicht 102:	Tarifvertragliche Finanzierungsregel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0: Gesamtbetrag, Ausbildungsverträge und Ausbildungsbetriebe sowie sonstige Angaben .....	155

## Verzeichnis der Schaubilder und Abbildungen

	Seite
Schaubild 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0 bis 1990 .....	20
Schaubild 2: Gesamtzahl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75 bis 1989 .....	27
Schaubild 3: Auszubildende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75 bis 1989 .....	28
Schaubild 4: Lehrvertragslös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0 .....	44
Schaubild 5: Struktur der Fachschul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	53
Schaubild 6: Weibliche Studierende nach Fachschulgruppen in der ehemaligen DDR 1989 .....	55
Schaubild 7: Indikatoren der Ausbildungsstellensituation in den Arbeitsamtsbezirken Hamm und Freising sowie im alten Bundesgebiet 1990 .....	63
Schaubild 8: Weiterbildungsquoten zum Industriemeister und Techniker nach Ausbildungsberuf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79
Schaubild 9: Ausländische Wohnbevölkerung im Alter von 15 bis unter 18 Jahren sowie ausländische Auszubildend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ach Ausbildungsjahren und Geschlecht .....	104
Schaubild 10: Ausgewählte Wirtschaftsbereiche und Tätigkeitsfelder 1988 in Prozent .....	125
Schaubild 11: Verhältnis berufsbildender/allgemeinbildender Fernunterrich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33
Schaubild 12: Anteil der berufs- und allgemeinbildenden Fernunterrichts-Lehrgänge mit begleitendem Unterrich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34
Schaubild 13: Verteilung der gemeldeten Ausbilder auf die Ausbildungsbereich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9 (1988) .....	141
Schaubild 14: Entwicklung der durchschnitt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76 bis 1990 .....	156
Schaubild 15: Durchschnittliche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pro Monat nach Ausbildungsbereichen 1990 .....	157
Abbildung 1: Angebots-Nachfrage-Relation aller Berufsbereiche .....	64
Abbildung 2: Arbeitslosenquote .....	65
Abbildung 3: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Berufsbereich Metallberufe .....	66
Abbildung 4: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Berufsbereich Bau- und Baunebenberufe .....	67
Abbildung 5: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Berufsbereich Waren- und Dienstleistungskaufleute .....	68

Die Enquête-Kommiss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Zukünftige Bildungspolitik – Bildung 2000“ hat im September 1990 ihren Schlußbericht vorgelegt. Er enthält wichtige Anregungen und Vorschläge, die die Bundesregierung in ihre Überlegungen zur Fort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einbeziehen wird. Die Bundesregierung sieht sich in der von der Kommission vertretenen Mehrheitsauffassung zu den Schwerpunkten zukünftiger Berufsbildungspolitik in ihrer in den letzten Jahren verfolgten Linie weitgehend bestätigt. Soweit die Kommission in bestimmten Fragen zu keiner einheitlichen Auffassung finden konnte, sollte die Diskussion zwischen allen an der Berufsbildung Beteiligten konstruktiv fortgeführt werden.

## 1.1 Ausbildungsplatzsituation 1990

### 1.1.1 Ausbildungsplatzsituation 1990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st die beste Ausbildungsplatzbilanz seit Bestehen der Bundesrepublik erreicht worden. Das Ausbildungsplatzangebot übertrifft die Nachfrage um rund 18%. Die Zahl der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innen war Ende September 1990 so gering wie noch nie seit Einführung der Statistik. Ihre Chancen für eine nachträgliche Vermittlung sind günstig (vgl. Kapitel 2).

Die Vermittlungschancen der jungen Frauen haben sich weiter verbessert und entsprechen jetzt annähernd denen junger Männer. Die Zahl junger Ausländer, die eine Berufsausbildung beginnen, ist erneut kräftig gestiegen.

Gegenüber dem Vorjahr ist die Zahl der neuen Verträge um 6,6% zurückgegangen. Die kleineren Ausbildungsbereiche Landwirtschaft, Hauswirtschaft und Seeschifffahrt sind davon überdurchschnittlich stark betroffen. In den großen Ausbildungsbereichen ist der Rückgang bei Industrie und Handel nur leicht überdurchschnittlich, im Handwerk liegt er leicht unter dem Durchschnitt. Öffentlicher Dienst und Freie Berufe haben 1990 annähernd die gleiche Zahl an Auszubildenden gewinnen können wie im Vorjahr (vgl. Kapitel 2).

Andererseits zeigt die Entwicklung der Ausbildungsangebote, daß der Bedarf an Nachwuchskräften kaum zurückgegangen ist, die Ausbildungsstellennachfrage aber immer weiter hinter dem Stellenangebot zurückbleibt. 114000 unbesetzte Ausbildungsplätze sind ein deutliches Zeichen für wachsende Nachwuchsproblem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avon sind wie im Vorjahr die Bauberufe, die Metallberufe und jetzt auch ein Teil der Elektroberufe sowie das Nahrungsmittelhandwerk, der Einzelhandel und der Gaststättenbereich besonders betroffen. In dieser Situation sind alle Möglichkeiten zu nutzen, dem drohenden Facharbeitermangel entgegenzuwirken. Das schließt die Ausbildung von Jugendlichen ein, die für eine betriebliche Ausbildung besonders motiviert werden und während der Ausbildung eine besondere Förderung und Unterstützung erhalten müssen, um das Ausbildungsziel zu erreichen.

Immer noch bleiben zu viele Jugendliche ohne Abschluß in einem anerkannten Ausbildungsberuf. Ihre Zahl muß auch im Interesse der Wirtschaft in den kommenden Jahren deutlich reduziert werden. Nach neueren Untersuchungen suchen über die Hälfte der Jugendlichen ohne Ausbildungsabschluß gar nicht erst einen Ausbildungsplatz; die übrigen scheitern während der Ausbildung oder haben keinen Ausbildungsplatz gefunden. Das ist eine Herausforderung für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u. a. im Berufswahlunter-

richt, und an die Berufsberatungen. Außerdem sind Veränderungen des betrieblichen Auswahlverhaltens und eine intensivere Betreuung während der Ausbildung auch unter stärkerer Nutzung von ausbildungsbegleitenden Hilfen notwendig, damit die Jugendlichen den Ausbildungsabschluß erreichen (vgl. Teil II, Kapitel 5.5).

Notwendig ist insbesondere aber auch eine nachhaltige Steigerung der Attraktivität dualer Ausbildung für leistungsstärkere Jugendliche, die heute schulische Bildungswege ein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vorziehen (vgl. Kapitel 1.4).

Nach wie vor sind regionale Unterschiede bei der Zahl der offenen Stellen und unvermittelten Bewerber/innen zu verzeichnen. Die 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weist zum 30. September 1990 bis auf eine Ausnahme erstmals in keinem der 142 Arbeitsamtsbezirke der alten Bundesländer weniger unbesetzte Plätze als unvermittelte Bewerber/innen aus. Im Süden hat der Nachwuchsmangel erheblich zugenommen, im Norden und Westen der Bundesrepublik ist der Ausbildungsstellenmarkt jetzt ausgeglichen.

### 1.1.2 Ausbildungssituation 1990 in den neuen Ländern

Während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 zunehmender Bewerbermangel festzustellen ist, konnten den Jugendlichen quantitativ ausreichende Bildungsmöglichkei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ur mit intensiver Unterstützung aller an der Berufsbildung Beteiligten angeboten werden. Allerdings entsprechen Berufsstruktur des Angebots und Ausbildungsqualität noch nicht immer den Anforderungen, die sich aus den künftig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en ergeben.

Ende Oktober 1990 hatten knapp 123 000 Jugendliche einen neuen Ausbildungsvertrag abgeschlossen; rund 80% werden nach westdeutschen Ausbildungsordnungen ausgebildet, die übrigen 20%, das sind knapp 25 000 Jugendliche, werden in Berufen nach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ausgebildet. Damit ist die Umstellung auf Ausbildungsberufe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und der Handwerksordnung schon 1990 in hohem Maße gelungen.

Die Umstel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f westdeutsche Regelungen und Strukturen war begleitet von gravierenden Veränderungen:

- Die Ausbildungskapazitäten der ehemaligen DDR (1989 wurden mit rund 135 000 Schulabgängern Ausbildungsverträge abgeschlossen) waren überwiegend in Großbetrieben, Kombinat und Produktionsgenossenschaften konzentriert. Dies galt sowohl für die praktische als auch für die theoretische Ausbildung (und zu einem großen Teil auch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Diese Kapazitäten wurden über Kooperationsverträge auch von anderen Betrieben genutzt — z. B. wurden in den Betriebsberufsschulen im Durchschnitt zu rund 70% Lehrlinge anderer Betriebe ausgebildet. Durch Konkurrenz und Entflechtung der Großbetriebe ist ein Teil dieser Kapazitäten verloren gegangen oder nicht mehr voll genutzt worden. Kleinere Nachfolgebetriebe waren häufig nicht mehr in der Lage, die für mehrere Betriebe oder für Großbetriebe ausgelegten Ausbildungseinrichtungen weiterzuführen. Hinzu kam, daß Kooperationsverträge zur Ausbildung von Lehrlingen aus anderen Betrieben aufgekündigt wurden.
- Die Verlagerung der Betriebsberufsschulen in kommunale Trägerschaft (Berufsschulgesetz vom 19. Juli 1990)

erfolgte in einer Zeit, in der die öffentlichen Haushalte erheblich unter knappen Finanzmitteln litten. Bauliche Mängel konnten nicht behoben und notwendige Modernisierungen nicht durchgeführt werden. In vielen Schulen war eine adäquate Ausbildung noch nicht möglich.

- Der Informationsstand, aber auch die Kenntnisse des Lehr- und Ausbildungspersonals über die nach den westdeutschen Ausbildungsordnungen durchzuführende Berufsausbildung waren unzureichend. Die notwendigen Unterlagen und Ausbildungsmittel mußten erst bereitgestellt werden, und zwar sowohl in den Betrieben als auch in den Schulen. Dies galt insbesondere für Lernmittel für die Ausbildung in kaufmännischen Berufen.
- Die Berufsberatung und die Kammern waren noch im Aufbau und deshalb noch nicht voll funktionsfähig. Damit fehlten in den neuen Ländern wichtige Beratungseinrichtungen und Strukturen für berufsbildungspolitische Maßnahmen.
- Das Handwerk, ein wichtiger Ausbildungsbereich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n dem etwa jeder dritte Auszubildende einen Ausbildungsplatz hat, war in der ehemaligen DDR ein lange vernachlässigter Wirtschaftsbereich, der sich vor dem Hintergrund der schwierigen wirtschaftlichen Lage in den neuen Ländern nur langsam entwickeln kann. Trotz hoher Zuwachsraten an Auszubildenden konnte dieser Ausbildungsbereich noch nicht die Ausbildungsleistung erbringen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Zudem sind Einrichtungen zur ergänzenden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zum großen Teil erst noch im Aufbau.
- Schließlich war eine mit westdeutschen Maßstäben vergleichbare Einstellung der Betriebe zur Berufsausbildung zu wecken. Ausbildung wurde noch zu häufig allein als Kostenfaktor beurteilt und noch zu wenig als unabdingbare Investition in die Zukunft. Diese Mentalität der Betriebe, die auf dem Hintergrund der wirtschaftlichen Schwierigkeiten und Neuorientierung zu werten ist, führte in den neuen Ländern bei vielen Betrieben dazu, neue Ausbildungsplätze eher zurückhaltend anzubieten.

Das Mißverhältnis von Angebot und Nachfrage machte Hilfsmaßnahmen notwendig. Dem wurde durch das Sofortprogramm des Ministerrates der ehemaligen DDR vom 22. August 1990 und durch das Vorsorgeprogramm der Bundesregierung vom 25. September 1990 entsprochen. Insgesamt wurden zur Unterstützung der Berufsvorbereitung und der Berufsausbildung über 300 Mio. DM (einschl. der v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geförderten Maßnahmen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zur Verfügung gestellt (vgl. Teil II, Kapitel 1.2). Gleichzeitig wurden Möglichkeiten zur Rückkehr in die allgemeinbildenden Schulen für vorzeitige Schulabgänger und ein freier Zugang zu weiterführenden Schulen für Jugendliche mit Abiturwunsch geschaffen.

Für 1991 werden Maßnahmen vorbereitet, die den Umstellungsprozeß in den neuen Ländern weiter erleichtern und beschleunigen sollen (vgl. Kapitel 1.2).

Ganz entscheidend ist jedoch der Beitrag der Wirtschaft selbst, der Aufbau einer sozialpartnerschaftlichen Infrastruktur und die Stärkung des Bewußtseins einer gemeinsamen Verantwortung von Arbeitgebern, Gewerkschaften und Staat in der Berufsbildung.

## 1.2. Entwicklung der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In den neuen Ländern müssen marktwirtschaftliche Strukturen entwickelt und gefestigt, eine mittelständische Wirtschaftsstruktur aufgebaut, Arbeitslosigkeit und Kurzarbeit überwunden sowie die Lebensverhältnisse insgesamt verbessert und den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ngeglichen werden. Dies erfordert in den nächsten Jahren eine umfassende und forcierte berufliche Qualifizierungsoffensive. Investitionen in Sachkapital und Infrastrukturmaßnahmen werden nur voll wirksam werden und die Wettbewerbsfähigkeit im Europäischen Binnenmarkt und am Weltmarkt nur sichern können, wenn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r Standortvorteil Qualifikation möglichst rasch zur Geltung kommt.

Es ist deshalb geboten, den ökonomischen, technischen und sozialen Erneuerungsprozeß durch massive Anstrengungen i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zu fördern und zu fundieren. Die Instrumente von Wirtschafts-, Arbeitsmarkt- und Berufsbildungspolitik müssen aufeinander bezogen und miteinander abgestimmt werden, wenn sie größtmögliche Effizienz entfalten sollen. Die Wirtschaftspolitik wird die Wirkungen ihrer struktur- und mittelstandspolitischen Maßnahmen nur optimieren können, wenn sie durch das arbeitsmarktpolitische Instrumentarium und die Berufsbildungspolitik unterstützt wird. Die Förderinstrumente der Arbeitsmarktpolitik müssen offensiv eingesetzt werden.

Nach den ordnungspolitischen Grundsätzen der Berufsbildungspolitik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liegt es in erster Linie in der Verantwortung der Wirtschaft, die notwendigen Qualifizierungsmaßnahmen und Berufsbildungsangebote sicherzustellen. Der Staat leistet dabei subsidiäre Hilfe. Die Situation der Wirtschaft in den neuen Ländern stellt an diese subsidiäre Funktion des Staates besondere Anforderungen. Finanzkraft und Erfahrung besonders der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 werden auf absehbare Zeit nicht ausreichen, die notwendigen Qualifizierungsangebote allein aus eigener Kraft bereitzustellen. Kommunen und Länder müssen äußerst kostspielige Infrastrukturaufgaben bewältigen, wenn sie den Rückstand gegenüber Westdeutschland aufholen sollen. Die Aufgabenteilung zwischen Staat und Wirtschaft, Bund und Ländern bei der Entwicklung und Finanzierung des Berufsbildungssystems wird deshalb in den neuen Ländern nur schrittweise den Gegebenheit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ngenähert werden können.

Die für einen mittelfristigen Zeitraum erforderliche subsidiäre staatliche Förderung beruflicher Qualifizierungsprozesse darf keinesfalls auf Dauer angelegt sein, sondern muß mit der Entwicklung der ostdeutschen Wirtschaft rasch wieder auf ein ordnungspolitisch vertretbares Maß in den Bereichen, in denen auch längerfristig subsidiäre staatliche Hilfe notwendig ist, zurückgeführt werden.

In jedem Fall ist Vorsorge zu treffen, daß Ausbildung für die neuen Länder in den neuen Ländern stattfindet. Abwanderung zur Ausbildung würde den Fachkräftenachwuchs in den neuen Ländern nachhaltig verringern. Im außerbetrieblichen Bereich wird sich der Bund mit seinen Fördermaßnahmen darauf konzentrieren, vorhandene Kapazitäten in der Übergangsphase zu erhalten und nutzbar zu machen. Er wird seine Förderpolitik im übrigen so gestalten, daß die Betriebe ihr Eigeninteresse an einem Angebot qualifizierter Berufsbildung erkennen und sich die Eigenverantwortlichkeit der Wirtschaft entwickeln kann. Subventionsmentalität sowie unerwünschte Gewöhnungsprozesse an staatliche

Aus diesen Daten ergäbe sich eine Nachfrage von rund 126 000 und ein Angebot von rund 124 000. Die tatsächliche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läßt sich eher aus den Schulabgängerzahlen und den Übergangsquoten errechnen (vgl. Kapitel 2.1.1). Für das Angebot an Ausbildungsstellen gibt es eine vergleichbar plausible Ersatzrechnung nicht.

Eine Angebots-Nachfrage-Relation für ganz Deutschland läßt sich deshalb derzeit nicht feststellen. Alle Anzeichen deuten darauf hin, daß es im Herbst 1990 keinen nachhaltigen Mangel an Ausbildungsplätzen in den neuen Ländern gab. Allerdings waren viele Ausbildungsverhältnisse aus wirtschaftlichen Gründen gefährdet.

### 2.1.1 Nachfrage

Eine Berufsberatungsstatistik, die in den wichtigsten Grundtatbeständen und Strukturen mit der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vergleichbar ist, wurde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erst ab 1. Oktober 1990 eingeführt.

Die Zentrale Arbeitsverwaltung der ehemaligen DDR hat als „Ausbildungsstellenbewerber“ 156 000 Schulabgänger ausgewiesen, die ihr von den Schulverwaltungen gemeldet wurden. Darin waren 25 000 Schulabgänger aus der achten und niedrigeren Klassen mehr enthalten als in den Vorjahren üblich. Diesen Schulabgängern stand 1990 noch der Zugang zu speziellen Ausbildungsberufen grundsätzlich offen.

Abzusetzen von der Schulabgängerzahl sind rund 12 500 Übergänger in Fachschul-Ausbildungen sowie rund 4 000 zusätzliche Übergänger in die geöffnete Erweiterte Oberschule. Weitere Angaben zur Nachfrage liegen nicht vor (zu den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n vgl. Kapitel 2.2).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gibt es die Date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allerdings wegen der wechselnden Einschaltquote — von 83 % (Vorjahr: 80 %; 1988: 85 %) — eher strukturell als der absoluten Höhe nach zu bewerten sind.

Wie im Vorjahr ist die Zahl der gemeldeten Ausbildungsstellenbewerberinnen (-6,9 %) stärker zurückgegangen als die der Ausbildungsstellenbewerber (-0,1 %). Der Anteil junger Frauen an der Gesamtzahl der Bewerber sank damit auf rund 52 % (Vorjahr: 54 %; 1988: 56 %).

Nach Schulabschlüssen hat sich bei der Struktur der gemeldeten Bewerber nichts Nachhaltiges geändert. 83,3 % der Bewerber (Vorjahr: 83,5 %) kommen aus der Sekundarstufe I, die anderen verfügen über eine Studienberechtigung. Der Anteil der Bewerber ohne Hauptschulabschluß ist auf 5,8 % angestiegen (Vorjahr: 5,3 %; 1988: 4,6 %). Der leichte Anstieg bei der Zahl der Bewerber mit Studienberechtigung ist ausschließlich auf Bewerber mit Studienerfahrung (Studienabbrecher oder -absolventen) zurückzuführen.

Auch die Altersstruktur der gemeldeten Bewerber könnte weitere Veränderungen der Struktur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signalisieren: Der Anteil der unter 18jährigen stabilisiert sich bei etwa 40 %, der Anteil der 18- bis 20jährigen nimmt tendenziell auf ebenfalls etwa 40 % ab, der Anteil der 21jährigen und älteren nimmt zu: Er beträgt jetzt 17,1 % (Vorjahr: 15,9 %; 1988: 14,0 %) und tendiert gegen 20 %.

Die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soweit sie i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ihren Niederschlag findet, entwickelte sich nach Berufsbereichen nicht gleichmäßig. Bei den Bau- und Baunebenberufen gab es einen Zuwachs um

2,9 %. Bei den Metall- (-0,9 %) und den Elektroberufen (-0,6 %) nahm die Zahl der Bewerber unterdurchschnittlich ab, bei den Waren- und Dienstleistungskaufleuten (-5,3 %) sowie den Organisations-, Verwaltungs- und Büroberufen (-7,7 %) hingegen überdurchschnittlich.

Die demografische Entwicklung trifft mithin — soweit die Berufsberatungsstatistik solche Schlußfolgerungen zuläßt — die Berufsbereiche durchaus nicht gleichmäßig. Insbesondere in den Chemie-, Metall- und Bauberufen gibt es weniger Nachfrage als Angebote; auch bei den Waren- und Dienstleistungskaufleuten ist dies der Fall. Bei den Organisations-, Verwaltungs- und Büroberufen sowie bei den Gesundheitsdienst-, Sozial- und Erziehungsberufen ist das nach wie vor anders: Hier übersteigt die Nachfrage das Angebot erheblich.

Das Interesse junger Ausländer an einer Berufsausbildung wächst weiter. Die Zahl der gemeldeten ausländischen Bewerber ist auf 57 207 angestiegen (+11,8 %). Die Zahl der deutschen Bewerber sank dagegen um 5,6 %. Der Anteil ausländischer Jugendlicher an allen Bewerbern beträgt nunmehr 12,3 % (Vorjahr: 10,6 %).

Die Ausländer sind — bisher noch — im Durchschnitt bei der Bewerbung jünger und haben niedrigere Schulabschlüsse als ihre deutschen Mitbewerber. Der Anteil junger Frauen ist geringer, das Interesse an Fertigungsberufen ist größer.

1990 lag bei 19,3 % (Vorjahr: 17,4 %) der gemeldeten Bewerber der Abgang aus der allgemeinen oder beruflichen Schule mehr als ein Jahr zurück. Neben Absolventen von Förderlehrgängen sind dies Ausbildungsabbrecher und Jugendliche, die zunächst eine (ungelernte) Arbeit aufgenommen haben. Auch junge Männer, die nach der Schule zunächst ihren Wehr- oder Zivildienst ableisten, gehören dazu. Die Zahl dieser Bewerber steigt weiter nachhaltig an. Bringt man dies mit den Änderungen in der Altersstruktur der Bewerber zusammen, könnte sich hier ein Erfolg der Anstrengungen zur Nachqualifizierung junger Erwachsener abzeichnen, die in den Jahren geburtenstarker Jahrgänge ohne Ausbildung geblieben sind.

### 2.1.2 Ausbildungsstellenangebot und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Die Zahl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is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uf 545 190 (-6,6 %) zurückgegangen. 98 % aller Nachfrager hatten im Durchschnitt einen Ausbildungsplatz erhalten; sie besetzten 83 % der angebotenen Ausbildungsplätze. Damit war die Ausschöpfung des Stellenangebots wiederum deutlich geringer als im Vorjahr (1989: 87 %, 1988: 91 %).

Die Entwicklung der Vertragszahlen war sowohl regional wie berufsstrukturell sehr unterschiedlich. Überdurchschnittliche Rückgänge an neuen Verträgen lagen in Niedersachsen (-8,4 %) Nordrhein-Westfalen (-8,3 %) und Baden-Württemberg (-7,7 %) vor. Nur in Berlin (West) konnten mehr Ausbildungsverträge als im Vorjahr (+4,8 %) abgeschlossen werden; darin ist eine Folge der Ausbildungsstellennachfrage aus den neuen Ländern zu sehen. Auch die berufsstrukturelle Entwicklung ist uneinheitlich: Mehr Verträge als im Vorjahr wurden im gewerblich-technischen Bereich z. B. in Bauberufen (+5 %) und für Bauzeichner (+15,3 %), aber auch für Radio- und Fernsichttechniker (+5,6 %) und technische Zeichner (+2,25) abgeschlossen. Dagegen gingen die Verträge für eine Bäcker- oder Fleischerausbildung (-19,4 %) oder Fleischerausbildung (-14,3 %) überproportional zurück.

tional zurück. Mehr Jugendliche als im Vorjahr haben sich für eine Berufsausbildung in den Gesundheitsdienstberufen entschieden (Tierärzthelfer/in: +5,8%, Apothekenhelfer/in: +3,1%, Arzthelfer/in: +0,8%); auch für Fachgehilfen/innen in wirtschafts- und steuerberatenden Berufen (+0,2%) und für den Bankkaufmann/frau (+6,4%) wurden mehr neue Verträge als im Vorjahr abgeschlossen. Deutlich weniger Interesse fanden z. B. die Berufe Bürohilfe/in (-23%), Fachverkäufer/in im Nahrungsmittelhandwerk (-23,1%) und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19,8%). Auch sektoral war die Entwicklung der Ausbildungsverträge sehr unterschiedlich: Zum Rückgang der Zahl neu abgeschlossener Verträge haben wie im Vorjahr die „kleinen“ Ausbildungsbereiche überproportional beigetragen.

Nach Ergebnissen einer Befragung an Berufsschu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aben rund 123 000 Jugendliche einen neuen Ausbildungsvertrag erhalten, 80% in Ausbildungsberufen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20% werden nach Ausbildungsregelungen der ehemaligen DDR ausgebildet. Eine deutlich wachsende Anzahl der neuen Verträge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einschließlich Berlin (Ost), entfällt auf Handwerksberufe (Ausbildung in Handwerksberufen findet auch in Wirtschaftsbereichen außerhalb des Handwerks statt), insgesamt 22 700 neue Ausbildungsverträge, das sind 23,5% aller neuen Ausbildungsverträge. Auch Industrieberufe, wie Industriemechaniker und Werkzeugmechaniker sind stark vertreten. Für kaufmännische Berufe sind dagegen — im Vergleich zu westdeutschen Anteilen — nur wenige Ausbildungsverträge abgeschlossen worden (13 900; 14,4% aller neuen Ausbildungsverträge). Die Zahl der neuen Verträge weist regionale Unterschiede auf, die mit der jeweiligen Wirtschafts- und Beschäftigungsstrukturen in den Regionen der neuen Länder zusammenhängen.

### 2.1.3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nd unbesetzte Ausbildungsstell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waren 13 969 gemeldete Bewerber am 30. September 1990 noch nicht vermittelt, das waren 3,0% aller gemeldeten Bewerber. Der Anteil junger Frauen an den am 30. September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n ist weiter deutlich auf 53,5% (Vorjahr: 56,8%) gefallen und nähert sich dem Frauenanteil an allen gemeldeten Bewerbern weiter an. 1989 waren 3,9% der gemeldeten Bewerberinnen im September noch nicht vermittelt, 1990 waren es 3,1%. Bei den jungen Männern sank die Quote der unvermittelten Bewerber etwas weniger von 3,5% auf 2,9%. Die Chancen von jungen Frauen und jungen Männern im Wettbewerb um Ausbildungsplätze sind global gesehen inzwischen nahezu gleich.

10 123 Bewerber hatten bis zum 30. September eine Alternative zur Ausbildung im dualen System gewählt, ihren Vermittlungswunsch in eine Ausbildungsstelle jedoch aufrechterhalten. Davon besuchten 21% eine berufliche Schule, befanden sich also in einem grundsätzlich auf die Ausbildungsdauer im dualen System anrechnungsfähigen Bildungsgang. 14% waren in einer berufsvorbereitenden Maßnahme, 10% besuchten eine allgemeinbildende Schule oder waren im Studium. 20% hatten eine (ungelernte) Arbeit aufgenommen. Ein großer Teil dieser Bewerber, die — aus welchen Gründen auch immer — zunächst keine Ausbildung im dualen System aufgenommen haben, dürfte später den Wunsch nach einer Ausbildung im dualen System verwirklichen wollen.

Von den am 30. September in den alten Ländern noch unbesetzten Stellen entfielen 57% auf Fertigungsberufe, allein 18% auf Bau- und Baunebenberufe. In den Ernährungsberufen konnten 33% der gemeldeten Stellen nicht besetzt werden, bei den Bau- und Baunebenberufen 28% und bei den Kaufleuten im Einzelhandel waren es 16% (vgl. hierzu auch Teil II, Kapitel 1.1).

## 2.2.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von Angebot und Nachfrage

### 2.2.1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1

Die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dürfte 1991 in Deutschland etwa 660 000 betragen, das sind etwa 4% weniger als 1990.

Die Nachfrageschätzung (vgl. Teil II, Kapitel 1.5) geht von folgenden Annahmen aus:

- Die Nachfrag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ürfte demografisch bedingt um etwa 20 000 oder rund 4% zurückgehen. Mit nachhaltigen Veränderungen beim Übergangverhalten der Schulabgänger wird nicht gerechnet. Es wird davon ausgegangen, daß sich die Schulabgänger aus dem Sekundarbereich I zu etwa zwei Drittel direkt im Anschluß an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und etwa drei Viertel der Absolventen beruflicher Schulen für eine Ausbildung im dualen System entscheiden. Insgesamt beginnen also rund 90% der Absolventen des Sekundarbereiches I früher oder später eine Ausbildung im dualen System; nicht alle erreichen jedoch den Berufsabschluß andere schließen eine weitere Ausbildung außerhalb des dualen Systems an. Die Nachfrage von Studienberechtigten dürfte unter 30% sinke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ird ein leichtes Wachstum der Jahrgangsstärken bei den 15- bis 17jährigen mehr als ausgeglichen durch Änderungen im Bildungverhalten, insbesondere durch verstärkte Übergänge in die erweiterte Oberschule, die zum Abitur führt. Die Übergangsquote von Studienberechtigten aus den neuen Ländern in eine Berufsausbildung im dualen System dürfte zunächst deutlich niedriger liegen als im Durchschnitt der alten Bundesländer.

Abgänge nach der 8. oder einer früheren Klasse dürfte es nach der Änderung der Schulpflichtregelungen nicht mehr geben. In die Annahmen ist einbezogen, daß Abgänge nach der 9. Klasse auch 1991 möglich sind. — Die Vorstellungen der neuen Länder zu den künftigen Schulpflichtregelungen sind im einzelnen noch nicht bekannt.

Für den Bereich beruflicher Vollzeitschulen wird — vor allem wegen der Umstrukturierung der Fachschulen, in die bisher rund 12 500 Schulabgänger zur Ausbildung aufgenommen wurden — insgesamt mit einem Rückgang der Aufnahmekapazität gerechnet. Hier kommt zusätzliche Nachfrage auf den Ausbildungsstellenmarkt.

Zu berücksichtigen ist außerdem, daß 1990 erstmals einjährige Bildungsgänge zur Berufsvorbereitung und zur beruflichen Grundbildung eingerichtet wurden, deren Absolventen 1991 Nachfrager nach Ausbildungsstellen werden. Andererseits werden auch 1991 Jugendliche in diese Bildungsgänge aufgenommen.

Nimmt man alles zusammen, wird ein Rückgang der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von etwa 10 000 oder rund 7% geschätzt.



Wanderungsbewegungen dürften den Nachfragerückga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teilweise kompensieren und den Ausbildungsstellenmark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tlasten, allerdings jeweils in regional unterschiedlichem Ausmaß.

Die Nachfragevorausschätzung für die neuen Länder kann sich wegen fehlender Erfahrungen und lückenhafter Daten noch nicht an den Definitionen des BerBiFG orientieren. Die Ergebnisse der Berufsbildungsstatistik für 1991 können schon deshalb von der Nachfragevorausschätzung abweichen. Die Vorausschätzung gibt dennoch Orientierungsdaten für das weitere berufsbildungspolitische Handeln.

### 2.2.2 Ausbildungsplatznachfrage in den kommenden Jahren

Sofern sich das Bildungsverhalten in den neuen Ländern nach 1991 stabilisiert, ist für einen mittelfristigen Zeitraum von einer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in Deutschland in der Größenordnung von gut 600 000 zu rechnen. In einer Berufsausbildung im dualen System wären dann etwa 5% der Erwerbstätigen. Diese Ausbildungsquote für den Fachkräftenachwuchs läge deutlich unter den Werten, die in den 80er Jahr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reicht wurden, wobei schon heute Fachkräftemangel beklagt wird.

### 2.2.3 Ausbildungsplatzangebot

In den alt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steigt — sieht man von regionalen und berufsstrukturellen Unterschieden ab — das Ausbildungsstellenangebot insgesamt deutlich die Nachfrage. Den Jugendlichen steht — mit den erwähnten Einschränkungen — ein auswahlfähiges Angebot zur Verfügung. Die Ausbildungsqualität ist — soweit es die Ausbildungsordnungen angeht — insgesamt auf hohem Stand. Nach wie vor gibt es Schwierigkeiten beim

Zugang von Problemgruppen zum Ausbildungsstellenmarkt. Die Erfolgchancen junger Frauen bei der Suche nach einem Ausbildungsplatz haben sich inzwischen denen junger Männer nahezu angeglichen, obwohl sich junge Frauen immer noch vorrangig für Ausbildungen im Dienstleistungsbereich interessieren, in dem der Nachwuchsmangel weniger ausgeprägt ist als im gewerblich-technischen Sektor.

In den neuen Ländern werden sich 1991 erhebliche Probleme bei der Versorgung der Jugendlichen mit Ausbildungsplätzen stellen:

- Die Verlängerung der Ausbildungszeiten durch die Einführung der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 wird Ausbildungskapazitäten beanspruchen und den Raum für Neueinstellungen zur Ausbildung einschränken.
- Es ist mit einer erheblichen Zahl von Auszubildenden zu rechnen, die nach dem Auslaufen von Überbrückungsfinanzierungen für die Unternehmen von Betriebsstilllegungen betroffen sind.
- Die wirtschaftlichen Schwierigkeiten führen bei vielen Unternehmen dazu, daß der Gedanke der Nachwuchssicherung durch Investitionen in Ausbildung dahinter noch zu oft zurücktritt.

Die berufsbildungspolitischen Folgerungen daraus müssen sorgfältig abgewogen werden. Eine allgemeine Subventionier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kommt aus der Sicht der Bundesregierung auch in den neuen Ländern nicht in Frage. Für einen Übergangszeitraum ist daher eine weitere Fortsetzung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 in erheblichem Umfang auch als Fortführung bisher betrieblicher Ausbildungsverhältnisse — notwendig. Vorrang hat jedoch — auch im Konkursfall — die Fortsetzung der Ausbildung in Betrieben.

Auch die Landesregierungen werden ihre Verantwortung wahrnehmen und das Angebot in beruflichen Schulen entsprechend ausgestalten müssen.

## Vorbereitung des Berufsbildungsberichts

Die Aufbereitung der statistischen Daten sowie wesentliche Beiträge zu Teil II des Berufsbildungsberichts 1991 (Informationen und Daten zur beruflichen Bildung) wurden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m Rahmen seiner gesetzlichen Aufgaben und vom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geleistet (vgl. Liste der beteiligten Mitarbeiter im Anhang).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hat ebenfalls an der Erstellung des Berichts mitgewirkt. Die Ergebnisse der Beratung im zuständigen Unterausschuß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sind in die Berichterstattung eingeflossen. Die Verantwortung für den Berufsbildungsbericht liegt bei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Übersicht 10: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m Berufsausbildungsstellen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Art des Schulabschlusses und nach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88 bis 1990**

Art des Schulabschlusses/ Staatsangehörigkeit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m Berufsausbildungsstellen									
	Insgesamt						Männlich		Weiblich	
	1988		1989		1990		1990		1990	
	Anzahl	Prozent <sup>1)</sup>	Anzahl	Prozent <sup>1)</sup>	Anzahl	Prozent <sup>1)</sup>	Anzahl	Prozent <sup>1)</sup>	Anzahl	Prozent <sup>1)</sup>
Ohne Haupt- schulabschluß	1 522	6,1	1 055	4,1	908	3,4	592	3,3	316	3,5
Hauptschul- abschluß	9 972	5,3	7 124	4,3	5 109	3,3	2 496	2,9	2 613	3,7
Mittlerer Abschluß	8 613	3,6	6 680	3,2	5 014	2,5	2 056	2,4	2 958	2,5
Fachhoch- schulreife	1 171	6,1	861	5,0	706	4,7	312	4,7	394	4,7
Hochschul- reife	2 610	4,7	1 990	3,6	1 792	3,3	807	3,7	985	3,0
Fachhochschul-/ Hochschulab- brecher und Fachhochschul-/ Hochschul- absolventen	903	10,0	568	7,1	440	5,3	229	5,1	211	5,5
Davon:										
Deutsche	21 446	4,4	15 356	3,6	11 600	2,8	5 287	2,8	6 313	2,9
Ausländer	3 345	7,4	2 922	5,7	2 369	4,1	1 205	3,8	1 164	4,6
<b>Insgesamt</b>	<b>24 791</b>	<b>4,6</b>	<b>18 278</b>	<b>3,8</b>	<b>13 969</b>	<b>3,0</b>	<b>6 492</b>	<b>2,9</b>	<b>9 477</b>	<b>3,1</b>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Übersicht 16, Seite 32

<sup>1)</sup> Anteil der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 an den gemeldeten Bewerbern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Erhebung zum 30. September

**1.2 Ausbildungsstellensituation 199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Nach den Erheb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waren im Jahr 1989 für den Lehrbeginn 1990 Lehrvertragsabschlüsse mit 129 860 Schulabgängern, darunter mit ca. 117 500 Absolventen der 10. Klasse, vorgesehen. Bis zum Stichtag 24. September 1990 wuchs die Zahl der Schulabgänger mit Ausbildungswunsch auf über 156 000 (vgl. Übersicht 11) an.

Insbesondere in den letzten Wochen vor Schuljahresende ist die Anzahl der vorzeitigen Schulabgänger stark angestiegen. Während 1989 19 560 vorzeitige Schulabgänger im Jahre 1990 eine Berufsausbildung aufnahmen, belief sich bis Ende September 1990 die Zahl der für eine Berufsausbildung 1990 anstehenden vorzeitigen Schulabgänger auf 35 485.

Ihre Vermittlung in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war in vielen Fällen nicht möglich, da die ausbildenden Betriebe Bewerbern mit einer höheren Schulbildung den Vorrang gaben. Ende August (vgl. Übersicht 12) war in den Arbeitsämtern mit 12 474 der Höchststand der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 registriert; Ende September waren noch 3 209 nicht vermittelte Bewerber erfaßt. Dieser Rückgang wurde erreicht, weil ein Teil der Bewerber in das Berufsgrundbildungsjahr, in das Berufsvorbereitungsjahr sowie in 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 der Arbeitsverwaltung einmündeten, oder ihnen die Fortsetzung des Schulbesuches an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bzw. an der Erweiterten Ober-

schule ermöglicht wurde. Es wird davon ausgegangen, daß ein großer Teil dieser Jugendlichen sich für den Ausbildungsbeginn 1991 erneut und zusätzlich zu den Schulabgängern des Entlassungsjahres 1991 um eine Berufsausbildungsstelle bewerben wird.

Außerdem dürfte ein Teil der Bewerber eine betriebliche Ausbildung im bisherigen Gebiet der Bundesrepublik aufgenommen haben.

**Übersicht 11: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die für die Aufnahme in eine Berufsausbildungsstelle 1990<sup>1)</sup> in Frage kamen**

Schulbildung	Anzahl
Abschluß 12. Klasse	3 229
Abschluß 10. Klasse	117 543
Abschluß 8. Klasse	27 309
Niedere Klassen	8 180
<b>Insgesamt</b>	<b>156 261</b>
Davon	
Männlich	88 459
Weiblich	67 802

<sup>1)</sup> Stichtag 24. September 1990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 Übersicht 12: Nicht vermittelte Bewerb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Stichtag		
	24. Juli 1990	27. August 1990	24. September 1990
Abschluß 12. Klasse	294	389	135
Abschluß 10. Klasse	2583	4594	1408
Abschluß 8. Klasse	4077	4526	1105
Niedere Klassen	2115	2965	561
<b>Insgesamt</b>	<b>9069</b>	<b>12474</b>	<b>3209</b>
Davon			
Männlich	4987	6795	1628
Weiblich	4082	5679	1581
Nachrichtlich:			
Wegen Lehrvertragslösungen	2493	6325	1587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Die Entwicklung des betrieblichen Ausbildungsstellenangebots hielt mit der Bewerbernachfrage nicht Schritt. Von den 129 100 gemeldeten Ausbildungsplätzen waren Ende September knapp 900 nicht besetzt (vgl. Übersicht 13).

Ein besonderes Problem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der neuen Länder stellte 1990 die hohe Zahl an Vertragslösungen dar; überwiegend waren davon neue Auszubildende betroffen (12 600). Bis Ende September wurden 18 500 vorzeitige Vertragslösungen gezählt; teils Folge von Konkursen, teils auf Grund wirtschaftlicher Schwierigkeiten von Ausbildungsbetrieben. Auch aus diesem Personenkreis konnten im September 1990 viele wieder vermittelt werden. Für andere fanden sich zumindest vorübergehende Lösungen durch Schulbesuch oder durch vom Arbeitsamt initiierte Bildungsmaßnahmen. Ende September waren rund 1 600 der von Vertragslösungen betroffenen Jugendlichen noch nicht vermittelt.

Dies ist auf dem Hintergrund der Umstellungsschwierigkeiten in den neuen Ländern ein gutes Ergebnis, das insbesondere durch den Einsatz von Soforthilfen der Arbeitsverwaltung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rreicht wurde. Mit dem im September beschlossenen „312-Mio.-Vorsorgeprogramm“ konnten rund 30 000 Jugendlichen zusätzliche Bildungsmöglichkeiten angeboten werden.

## Übersicht 13: Berufsausbildungsstellen und Anzahl der unbesetzten Berufsausbildungs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Stichtag	Berufsausbildungsstellen	Unbesetzte Berufsausbildungsstellen
24. Juli 1990	131 345	1 591
24. September 1990	129 191	892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Nach ersten Einschätzungen wurde in den neuen Ländern zu Beginn des Ausbildungsjahres 90/91 von rund 140 000 Jugendlichen ein betrieblicher Ausbildungsplatz im dualen System nachgefragt.

Zur Nachfrage werden alle Schulabgänger (rund 156 300) 1990 gezählt, die nicht in die allgemeinbildenden Schulen (POS oder EOS) zurückkehrten oder eine schulische Ausbildung begonnen haben (Erstausbildung in der Fachschule). Rund 6 000 Auszubildende mit Ausbildungsbeginn 1989 und früher, die ihren bisherigen Ausbildungsplatz wegen Konkurses, Betriebstillegung oder wegen anderer wirtschaftlicher Gründe verloren hatten, traten erneut als Nachfrager auf. Jugendliche, deren Ausbildungsvertrag vor Beginn der Ausbildung gekündigt wurde, sind Schulabgänger 1990, d. h. Bestandteil der 156 300 erfaßten Schulabgänger.

Dem stand ein betriebliches Angebot, das nicht über Vorsorgemaßnahmen geschaffen oder erhalten wurde, von rund 96 000 Ausbildungsplätzen gegenüber. Über Hilfsmaßnahmen sind bis Oktober 1990 rund 23 500 weitere Ausbildungsmöglichkeiten geschaffen bzw. gesichert oder aktiviert worden. Rund 10 000 Jugendliche fanden in Grundbildungslehrgängen der Arbeitsverwaltung sowie im schulischen Berufsvorbereitungs- und Berufsgrundbildungsjahr einen Platz. Schätzungsweise 10 000 Jugendliche haben eine Ausbildung in Westdeutschland aufgenommen.

Nach dieser Rechnung haben rund 67 % der Nachfrager einen normalen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halten. Rund 8 % (11 500) befanden sich in nach dem Vorsorgeprogramm geförderten betrieblichen Ausbildungsbildungsplätzen (Konkurslehrlinge). Für die Nutzung vorhandener Berufsausbildungseinrichtungen (überwiegend ehemalige betriebliche Ausbildungswerkstätten) wurden an neue Träger über/außerbetrieblicher Einrichtungen Mittel für die Ausbildung von rund 6 % (8 500) der Jugendlichen vergeben. Weitere 6 % (8 300) der Jugendlichen haben ein Berufsvorbereitungsjahr/Berufsgrundschuljahr an beruflichen Schulen aufgenommen, für die Personal- und Betriebsmittel zu sichern waren.

Ende September 1990 gab es rund 2 500 Jugendliche, die an einer berufsvorbereitenden Maßnahme im Bereich der Berufsberatung teilnahmen oder für die eine solche vereinbart worden ist, davon rund 1 900 an Förderlehrgängen und 600 an Grundausbildungslehrgängen. Mittel zur Ausdehnung auf 4 000 Plätze standen noch zur Verfügung.

Im Bereich der Förderung der 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nach § 40c AFG gab es Ende September 1990 3 800 Förderfälle. Darunter waren 3 600 Jugendliche, die wegen Mangels a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nicht vermittelt werden konnten oder deren Lehrverträge während der Ausbildungszeit — infolge Konkurses des Ausbildungsbetriebes — gelöst wurden. Mittel zur Ausdehnung auf insgesamt 11 500 Fälle standen noch zur Verfügung.

Mit Hilfe des Bundes ist somit die Ausbildung bzw. Berufsvorbereitung von bisher rund 33 600 Jugendlichen gesichert worden (rund 23 % der Gesamtnachfrage).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waren die zuständigen Stellen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noch nicht in der Lage, die Zahl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zum 30. September 1990 zu liefern. Deshalb wurde für das Jahr 1990 die Erhebung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über die Berufsschulen ermittelt. Die

Erhebung wurde durchgeführt vom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in Zusammenarbeit mit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850 Berufsschulen haben Auszubildende gemeldet, darunter auch Schulen, die zu größeren Schuleinheiten zusammengefaßt wurden bzw. werden.

Nach den Ergebnissen der Befragung begannen in den neuen Ländern (einschließlich Berlin-Ost) rund 123 000 Jugendliche ihre Ausbildung im Herbst 1990 (vgl. **Übersicht 14**). Die überwiegende Zahl der Jugendlichen hat Verträge für Ausbildungsberufe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abgeschlossen. Etwa 25 000 Jugendliche, das sind 20 %, werden noch nach den Berufsbildern der früheren DDR ausgebildet. Darunter sind 2 600 Verträge für di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Übersicht 14: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zum Ausbildungsbeginn 199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Land	Anzahl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zum 30. Sept.	Nach § 3 des Berufsbildungsgesetzes	Nach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Anzahl		
Neue Bundesländer und Berlin (Ost)	122953	97484	25469
Berlin (Ost)	7579	5897	1682
Brandenburg	19943	15923	4020
Mecklenburg/Vorpommern	14519	11275	3244
Sachsen-Anhalt	22470	17163	5307
Sachsen	37671	30234	7437
Thüringen	20771	16992	3779

Quelle: Erhebung in Berufsschulen der neuen Länder;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1990

Eine große Anzahl von Verträgen entfällt auf die Handwerksberufe, wie Kraftfahrzeugmechaniker, Tischler, Fleischer, und Bäcker. Aber auch Industrieberufe wie Industriemechaniker und Werkzeugmechaniker sind stark vertreten. Kaufmännische und Büro-Berufe werden dagegen in den fünf neuen Ländern noch sehr wenig ausgebildet.

Die Zahl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weist regionale Unterschiede auf, die mit der jeweiligen Wirtschafts- und Beschäftigungsstruktur zusammenhängen. Die Hälfte der neu abgeschlossenen Verträge entfällt auf die Länder Sachsen und Sachsen-Anhalt. In Mecklenburg-Vorpommern ist die Zahl der Auszubildenden im Verhältnis zur Bevölkerungszahl geringer als in den übrigen neuen Ländern.

## 1.3 Bestands- und Strukturdaten der betrieblichen und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bis 1989

### 1.3.1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 1.3.1.1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m 31. Dezember 1989 standen 1,55 Millionen Jugendliche in einer betrieblichen Ausbildung. Gegenüber dem Vorjahr sind dies 106 000 Auszubildende (-6,4%) weniger. Der Rückgang hat sich damit, bedingt durch die demografische Entwicklung, beschleunigt. Bei den weiblichen Auszubildenden ist der Rückgang um 45 000 Auszubildenden gegenüber den Vorjahren (10 000 bis 20 000 weniger) deutlich höher ausgefallen (vgl. **Schaubild 2**). Im Vergleich zu 1985, als mit 1,83 Millionen ein Höchststand an Auszubildenden erreicht wurde, werden rund 300 000 Auszubildende weniger ausgebildet.

Von diesem Rückgang war das Handwerk am stärksten betroffen. Mit 533 000 Lehrlingen wurde der Vorjahresstand um 7,8 % (45 000) unterschritten. Im Ausbildungsbereich Industrie und Handel wurden 783 000 Auszubildende registriert, das sind 5,4 % (44 000) weniger als Ende 1988. Bei den Freien Berufen (Rechtsanwälte, Ärzte u. a.) ist der Rückgang vergleichsweise gering (-4 000 oder -3,2%). Dagegen sind die Auszubildendenzahlen in der Landwirtschaft, der Hauswirtschaft und im öffentlichen Dienst deutlicher zurückgegangen (vgl. **Schaubild 3**).

Entsprechend haben sich auch die Anteile der Ausbildungsbereiche verändert. Zu Beginn der 80er Jahre wurden im Handwerk über 40 % aller Auszubildenden ausgebildet; im Jahre 1989 waren es noch 34,3 % (vgl. **Übersicht 15**). Die Bereiche, die überwiegend in kaufmännischen und Büroberufen ausbilden (z. B. die Freien Berufe), haben dagegen ihre Ausbildungsanteile halten können. Mehr als jeder zweite Auszubildende hat einen Ausbildungsplatz im Bereich von Industrie und Han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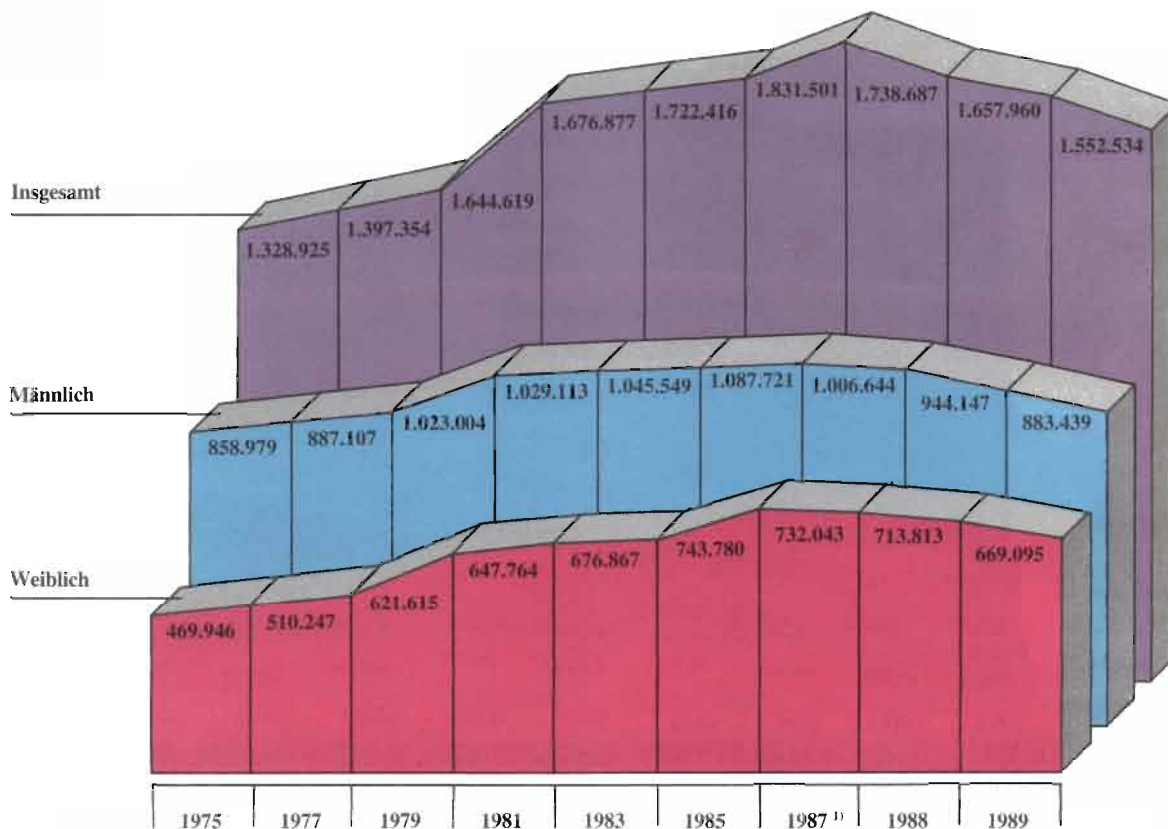
Der Anteil weiblicher Auszubildender hat sich mit 43,1 % gegenüber dem Vorjahr nicht verändert (vgl. **Übersicht 16**). Während in den zurückliegenden Jahren die Anzahl der jungen Frauen in der Berufsausbildung — im Vergleich zur Entwicklung bei den Männern — nicht so stark zurückging und damit eine anteilige Steigerung der Ausbildung junger Frauen verbunden war, werden 1989 die Auswirkungen der demografischen Entwicklung auch in der rückläufigen Zahl weiblicher Auszubildender sichtbar. Insgesamt hat jedoch in den letzten 15 Jahren der Anteil junger Frauen um 8 Prozentpunkte zugenommen.

Freie Berufe und Hauswirtschaft haben mit über 95 % sehr hohe Frauenanteile. Im Handwerk und in der Landwirtschaft liegen die entsprechenden Anteile bei einem Drittel und darunter, wenngleich sie in den letzten Jahren hier beachtlich zugenommen haben (vgl. **Übersicht 16**).

Die Konzentration der Auszubildenden auf einige wenige Ausbildungsberufe hat 1989 wieder etwas zugenommen. Bei den männlichen Auszubildenden umfassen die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Berufe 35,8 % (Vorjahr 35,3%), bei den Frauen 55,0 % (Vorjahr 54,7 %) der Auszubildenden (vgl. **Übersicht 17**). Seit Ende der 70er Jahre war bislang ein stetiger Rückgang der Berufe-Konzentration festzustellen. Diese Entwicklung beruht auf der zunehmenden Bevorzugung kaufmännischer Berufe und dem abnehmenden Interesse an gewerblichen Berufen durch die Auszubilden-

Schaubild 2

Gesamtzahl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75 bis 1989



1) Ab 1987 einschließlich Auszubildende in Ausbildungsgängen für Behindert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Erhebung zum 31. Dezember



den. Die günstige Angebotssituation und die damit verbundenen verbesserten Berufswahlmöglichkeiten auf dem Lehrstellenmarkt haben hierzu beigetragen.

In der Rangfolge der zehn am häufigsten gewählten Berufe spiegeln sich diese Entwicklungen wider. Bei den männlichen Auszubildenden nehmen die Berufe Kaufmann im Groß- und Außenhandel, Bankkaufmann, Industriekaufmann und Kaufmann im Einzelhandel vordere Plätze ein, während diese Liste in den zurückliegenden Jahren fast ausschließlich von gewerblichen Berufen, insbesondere des Handwerks, angeführt wurde.

Bei den Frauen steht der Beruf Kauffrau im Einzelhandel schon an zweiter Stelle in der Rangfolge der von jungen Frauen am stärksten besetzten Berufe und zwar nach dem Beruf Friseurin (vgl. Übersicht 18). Der Verkäuferinnenberuf hat erheblich an Bedeutung verloren und auch bei den Fachverkäuferinnen im Nahrungsmittelhandwerk werden deutlich weniger Auszubildende ausgebildet als im Vorjahr (38 393 gegenüber 45 597). Alle zehn am häufigsten von Frauen gewählte Berufe gehören dem Dienstleistungs- und Bürobereich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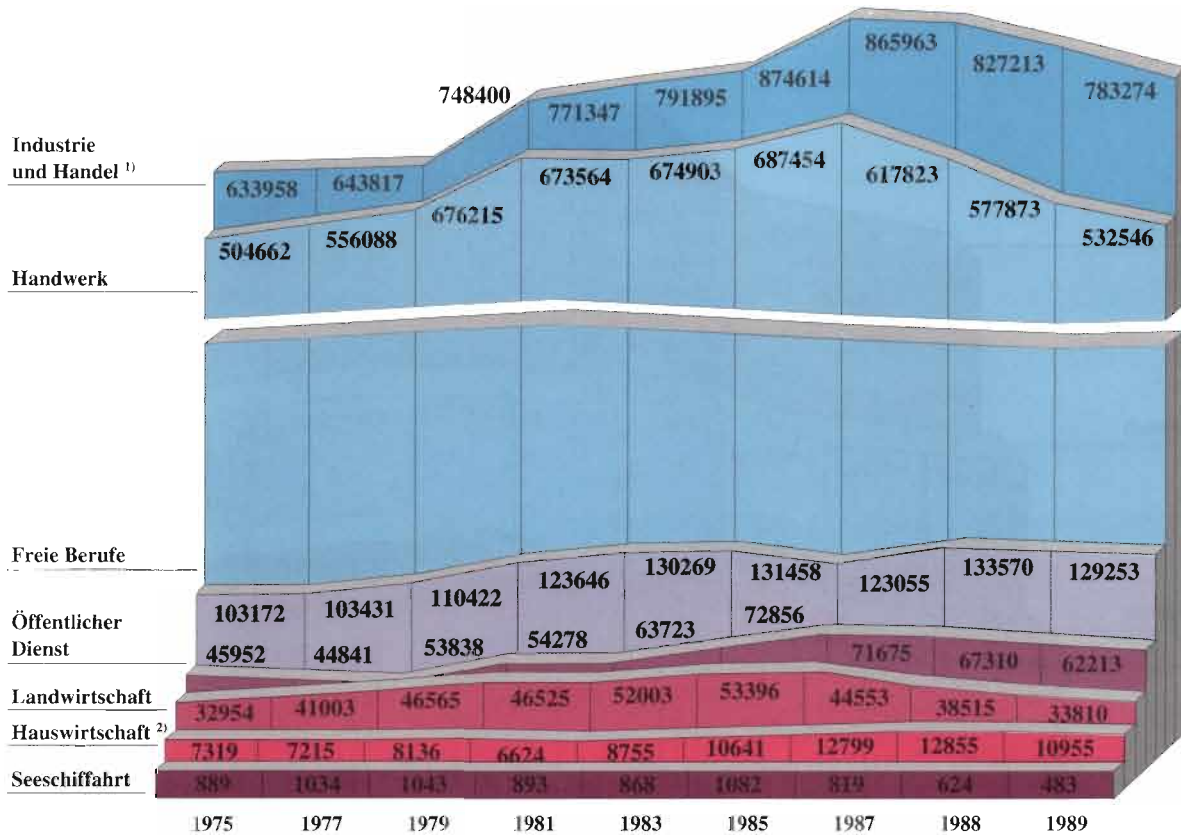
Unter den Auszubildenden sind 9 300 Jugendliche in Ausbildungsgängen für Behinderte (§ 48 BBiG und § 42b HwO). Gegenüber dem Vorjahr (9 000) ist die Zahl leicht gestiegen.

Die durchschnittliche Dauer der Ausbildung, gemessen an der für den einzelnen Beruf in den Ausbildungsordnungen festgelegten Regelausbildungsdauer, beträgt im Jahre 1989 durchschnittlich 36,5 Monate. Dieser Wert ist in den letzten Jahren leicht angestiegen. Anfang der 80er Jahre lag der Wert bei 35,0 Monaten<sup>1)</sup>, so daß sich in zehn Jahren eine Erhöhung der Regelausbildungsdauer um 1,5 Monate ergeben hat. Dies ist zurückzuführen auf den gestiegenen Anteil der Auszubildenden, für die eine Regelausbildungsdauer von drei bzw. dreieinhalb Jahren vorgesehen ist. Die tatsächliche Ausbildungszeit ist durch Verkürzungen der Ausbildungszeit, z. B. auf Grund einer angerechneten schulischen Vorbildung oder durch die vorzeitige Zulassung zur Prüfung auf Grund guter Leistungen, geringer.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89, Seite 91

Schaubild 3

**Auszubildende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75 bis 1989**



1) Einschließlich Banken, Versicherungen, Gast- und Verkehrsgewerbe  
2) Hauswirtschaft im städtischen Bereich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Erhebung zum 31. Dezember



**Übersicht 15: Auszubildende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3 bis 1989**

Jahr	Auszubildende							
	Insgesamt	Davon im Ausbildungsbereich						
		Industrie und Handel	Handwerk	Landwirtschaft	Öffentlicher Dienst	Freie Berufe	Hauswirtschaft <sup>1)</sup>	Seeschifffahrt
Tausend	Prozent							
1973	1330,8	52,5	34,9	1,9	3,7	6,7	0,5	0,1
1975	1328,9	47,7	38,0	2,5	3,5	7,8	0,6	0,1
1977	1397,4	46,1	39,8	2,9	3,2	7,4	0,5	0,1
1979	1644,6	45,5	41,1	2,8	3,3	6,7	0,5	0,1
1981	1676,9	46,0	40,2	2,8	3,2	7,4	0,4	0,1
1983	1722,4	46,0	39,2	3,0	3,7	7,6	0,5	0,1
1985	1831,5	47,8	37,5	2,9	4,0	7,2	0,6	0,1
1987	1738,7	49,8	35,5	2,6	4,1	7,2	0,6	0,1
1988	1658,0	49,9	34,9	2,3	4,1	8,1	0,7	0,1
1989	1552,5	50,4	34,3	2,2	4,0	8,3	0,7	0,1

<sup>1)</sup> Hauswirtschaft im städtischen Bereich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 Übersicht 16: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an allen Auszubildend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73 bis 1989 in Prozent

Jahr	Weibliche Auszubildende							
	Insgesamt	Davon im Ausbildungsbereich						
		Industrie und Handel	Handwerk	Landwirtschaft	Öffentlicher Dienst	Freie Berufe	Hauswirtschaft <sup>1)</sup>	Seeschifffahrt
1973	35,4	41,1	17,4	19,4	21,1	93,4	100,0	0,0
1975	35,4	39,4	19,1	19,2	29,5	93,9	100,0	0,0
1977	36,5	40,4	21,7	21,6	34,6	94,9	99,9	0,0
1979	37,8	43,1	22,5	24,0	40,0	95,6	99,9	0,6
1981	38,6	43,4	22,5	27,0	44,0	95,8	99,9	0,7
1983	39,3	42,5	23,8	31,4	47,5	95,6	99,6	0,9
1985	40,6	43,5	25,6	31,4	47,3	95,7	99,7	0,2
1987	42,1	43,8	27,8	32,4	48,0	95,7	98,5	2,2
1988	43,1	43,9	28,3	33,4	48,3	96,3	98,3	2,9
1989	43,1	43,8	28,0	33,4	48,5	96,2	98,1	2,9

<sup>1)</sup> Hauswirtschaft im städtischen Bereich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 Erweiterung des Berufsausbildungsspektrums junger Frauen

Auch 1989 gibt es Hinweise auf eine Erweiterung des Berufsspektrums junger Frauen. Vor allem in den sogenannten männlich dominierten Berufen (Anteil weiblicher Auszubildender unter 20 %) werden mittlerweile fast 9 % aller weiblicher Auszubildender (rund 60 000) ausgebildet (vgl. Übersicht 19). Gegenüber dem Vorjahr zeigen sich z. B. in folgenden männlich dominierten Berufen Verbesserungen der Frauenanteile bzw. deutliche Anstiege der Auszubildendenverhältnisse von Frauen:

	Auszubildendenverhältnisse von Frauen			
	1989		1988	
	Anzahl	Prozent	Anzahl	Prozent
Kraftfahrzeugmechaniker/in	961	1,4	819	1,1
Industriemechaniker/in	784	2,2	694	1,7
Tischler/in	3 175	10,2	2 937	9,2
Industriemechaniker/in	590	2,1	453	1,6
Energieelektronikerin (Betriebstechnik)	539	2,4	514	2,0
Energieelektroniker/in (Anlagentechnik)	209	1,9	148	2,1
Radio- und Fernsehtechniker/in	255	2,6	226	2,3
Industriemechaniker/in (Geräte- und Feinwerktechnik)	843	9,4	623	6,4

Quelle: Grund- und Strukturdaten, 1989/90 und 1990/91,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utlich anders verläuft die Entwicklung im Bereich der Ausbildung zum Kommunikationselektroniker: 1989 hatten 1 090 weibliche Auszubildende einen Auszubildendenver-

trag in diesem Beruf, dies entspricht einem Frauenanteil von 7 %; 1988 waren es noch 1 566, bei einem Frauenanteil von 9,6 %.

Auch bei den Berufsausbildungen mit einem Frauenanteil von 20 % bis 40 % (überwiegend männlich besetzte Ausbildungsberufe) hat sich der Anteil weiblicher Auszubildender erhöht, und zwar auf 7,2 %. Insgesamt werden mittlerweile über 100 000 junge Frauen in sogenannten männlich dominierten oder überwiegend männlich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ausgebildet.

Reduziert hat sich der Anteil junger Frauen in Berufsausbildungen mit 80- bis 100%igem Frauenanteil. 1989 lag der Anteil weiblicher Auszubildender in diesen Berufen erstmals unter 40 %.

Am deutlichsten ist der Rückgang der Zah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bei der Ausbildung zur Verkäuferin. Im Vergleich zum Vorjahr befinden sich rund 10 000 Frauen weniger in dieser Ausbildung, dies entspricht einem Rückgang um fast 30 %. Noch höher ist mit fast 38 % der Rückgang männlicher Auszubildender in diesem Ausbildungsgang.

Insgesamt zeigt sich, daß der Anteil männlicher Auszubildender an den sogenannten frauentypischen Berufen (Anteil männlicher Auszubildender unter 20 %) sinkt, während der Anteil weiblicher Auszubildender in nahezu allen gewerblich-technischen Berufen zunimmt.

In einigen Berufen der Bereiche Bau, Bergbau und Gießereien dürfen Frauen auf Grund der zur Zeit noch fortgeltenden arbeitsschutzrechtlichen Bestimmungen nicht ausgebildet werden. Dies betrifft 19 Ausbildungsberufe. In diesen Berufen werden rund 45 000 männliche Jugendliche ausgebildet, das sind 3 % der Auszubildenden.

### Neue Ausbildungsordnungen

Im Jahre 1989 wurde der dritte Ausbildungsjahrgang für die neuen industriellen Metall- und Elektroberufe eingestellt.

**Übersicht 17: Auszubildende in den fünf, zehn und fünf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nach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75 bis 1989 in Prozent**

Jahr	Auszubildende in de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Männlich			Weiblich		
	Fünf	Zehn	Fünfzehn	Fünf	Zehn	Fünfzehn
1975	27,9	41,3	50,6	42,0	63,1	75,2
1977	25,5	39,2	49,7	41,6	63,0	74,0
1979	26,2	40,2	50,6	41,6	61,5	72,4
1981	25,9	39,6	49,9	38,3	59,5	70,5
1983	24,7	38,5	49,2	36,6	56,8	68,7
1985	23,7	37,2	48,2	36,0	56,1	67,9
1987	22,7	36,0	46,1	34,4	54,9	66,7
1988	22,0	35,3	44,8	33,1	54,7	66,3
1989	22,2	35,8	45,2	33,7	55,0	66,7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Die Möglichkeit von Vertragsabschlüssen in den alten Berufen — gemäß Übergangsfrist 1989 noch möglich — ist 1989 nur noch in wenigen Fällen genutzt worden.

Insgesamt wurden in den neuen Metallberufen 38 665 Verträge abgeschlossen, rund 1 000 mehr als im Vorjahr. Die meisten Verträge (8 621 oder 22 %) entfallen auf den Beruf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Fachrichtung Maschinen- und Systemtechnik bzw. Fachrichtung Betriebstechnik (8 372 oder 22 %) (vgl. Übersicht 20).

Entwicklungsvergleiche mit den alten Berufen sind nur bedingt möglich, da die neuen Berufe andere Schneidungen der Ausbildungsinhalte besitzen als die bisherigen Ausbildungsberufe. So hat der Beruf Industriemechaniker/Indu-

striemechanikerin Produktionstechnik keinen Berufsvorgänger. Die berufliche Verteilung der Auszubildenden auf die neuen Metallberufe ist breiter als dies bei den bisherigen Berufen der Fall war.

Die Zahl der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für die industriellen Metallberufe ging demografisch bedingt zurück, jedoch weniger stark als dies im Durchschnitt der gewerblichen Berufe der Fall war (-3,3 % zu -10,4 %, Übersicht 22). Der Frauenanteil ist mit 4,0 % gering, liegt aber höher als dies vor der Neuordnung der Fall war (2,4 %).

3 800 Auszubildende haben in den neuen Metallberufen den Vertrag wieder gelöst, das sind bezogen auf die Neuabschlüsse 9,7 %. Damit liegt der Anteil der Vertragslösun-

**Übersicht 18: Die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1989 für männliche und weibliche Auszubildende im alten Bundesgebiet**

Ausbildungsberuf	Aus- bildungs- bereich	Männ- liche Auszu- bildende	Anteil an allen männ- lichen Auszu- bildenden	Ausbildungsberuf	Aus- bildungs- bereich	Weib- liche Auszu- bildende	Anteil an allen weib- lichen Auszu- bildenden
Kraftfahrzeugmechaniker	Hw	69 151	7,8	Friseurin	Hw	51 814	7,7
Elektroinstallateur	Hw	45 818	5,2	Kauffrau im Einzelhandel	IH	45 939	6,9
Tischler	Hw	28 017	3,2	Bürokauffrau	IH	45 220	6,8
Kaufmann im Groß- und Außenhandel	IH	27 962	3,2	Arzthelferin	FB	42 178	6,3
Bankkaufmann	IH	25 448	2,9	Industriekauffrau	IH	40 006	6,0
Maler und Lackierer	Hw	25 212	2,9	Fachverkäuferin im Nahrungsmittelhandwerk	Hw	38 393	5,7
Gas- und Wasser- installateur	Hw	24 106	2,7	Zahnarzthelferin	FB	29 689	4,4
Industriekaufmann	IH	24 026	2,7	Bankkauffrau	IH	28 581	4,3
Kaufmann im Einzelhandel		23 938	2,7	Verkäuferin	IH	24 864	3,7
Industriemechaniker Betriebstechnik	IH	22 245	2,5	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IH	21 273	3,2
<b>Insgesamt</b>		<b>315 923</b>	<b>35,8</b>	<b>Insgesamt</b>		<b>367 957</b>	<b>55,0</b>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 Übersicht 19: Weibliche Auszubildende in ausgewählten Berufsgruppierungen im alten Bundesgebiet 1977, 1988 und 1989

Gruppe der Ausbildungsberufe <sup>1)</sup>	Weibliche Auszubildende					
	Insgesamt			Anteil an der Gesamtzah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1977	1988	1989	1977	1988	1989
	Anzahl			Prozent		
Männlich dominierte Berufe (0% bis 20% weibliche Auszubildende)	13 000	61 000	60 000	2,5	8,5	8,9
Überwiegend männlich besetzte Berufe (20% bis 40% weibliche Auszubildende)	32 000	49 000	48 000	6,3	6,9	7,2
Gemischt besetzte Berufe (40% bis 60% weibliche Auszubildende)	99 000	128 000	119 000	19,4	17,9	17,8
Überwiegend weiblich besetzte Berufe (60% bis 80% weibliche Auszubildende)	126 000	188 000	181 000	24,7	26,4	27,1
Weiblich dominierte Berufe (80% bis 100% weibliche Auszubildende)	240 000	287 000	261 000	47,1	40,3	39,0

<sup>1)</sup> Gruppenbildung nach dem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im Jahr 1977 oder späte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 Übersicht 20: Auszubildende in den neuen industriellen Metall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sup>1)</sup>	
	1988	1989
<b>Industriemechaniker/in</b>		
— Produktionstechnik	2 302	2 243
— Betriebstechnik	8 598	8 372
— Maschinen- und Systemtechnik	8 094	8 621
— Geräte- und Feinwerktechnik	3 189	3 484
Zusammen	22 183	22 720
<b>Werkzeugmechaniker/in</b>		
— Stanz- und Umformtechnik	3 827	3 827
— Formentechnik	1 472	1 586
— Instrumententechnik	49	46
Zusammen	5 348	5 459
<b>Zerspanungsmechaniker/in</b>		
— Drehtechnik	2 816	3 093
— Automaten-Drehtechnik	403	411
— Frästechnik	1 037	1 124
— Schleiftechnik	194	200
Zusammen	4 450	4 828
<b>Konstruktionsmechaniker/in</b>		
— Metall- und Schiffbautechnik	1 113	1 166
— Ausrüstungstechnik	696	814
— Feinblechbautechnik	1 072	1 073
Zusammen	2 881	3 053
<b>Anlagenmechaniker/in</b>		
— Apparatechnik	398	372
— Versorgungstechnik	1 170	1 115
Zusammen	1 568	1 487
<b>Automobilmechaniker/in</b>	1 178	1 118
<b>Insgesamt</b>	<b>37 608</b>	<b>38 665</b>

<sup>1)</sup> Einschließlich einiger — weniger — Verträge, die im Bereich des Handwerks für die neuen Berufe abgeschlossen wurd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gen (vgl. Kapitel 1.3.4) deutlich niedriger als im Durchschnitt des dualen Systems (21,2%). 59% der Vertragslösungen werden in der Probezeit oder im ersten Ausbildungsjahr vorgenommen.

In den vier neu geordneten industriellen Elektroberufen mit sieben Fachrichtungen wurden zum 31. Dezember 1989 16 500 Verträge abgeschlossen, 200 mehr als im Vorjahr (vgl. Übersicht 21). Die Zahl der Neuabschlüsse wurde im indu-

## Übersicht 21: Auszubildende in den neuen industriellen Elektroberufen im alten Bundesgebiet 1988 und 1989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sup>1)</sup>	
	1988	1989
<b>Elektromaschinenmonteur/in</b>	137	153
<b>Energieelektroniker/in</b>		
— Anlagentechnik	3 874	3 839
— Betriebstechnik	5 085	5 253
Zusammen	8 959	9 092
<b>Industrieelektroniker/in</b>		
— Produktionstechnik	1 050	1 131
— Gerätetechnik	2 195	2 247
Zusammen	3 245	3 378
<b>Kommunikationselektroniker/in (ohne Deutsche Bundespost)</b>		
— Telekommunikationstechnik	884	878
— Informationstechnik	2 276	2 173
— Funktechnik	834	859
Zusammen	3 994	3 910
<b>Insgesamt</b>	<b>16 335</b>	<b>16 533</b>

<sup>1)</sup> Einschließlich einiger — weniger — Verträge, die im Bereich des Handwerks für die neuen Berufe abgeschlossen wurd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89;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Übersicht 22: Auszubildende in den neuen und „alten“ Ausbildungsberufen in den Bereichen Metall, Elektro und Einzelhandel im alten Bundesgebiet 1986 bis 1989**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Veränderung 1989 zu 1988 Prozent
	1986	1987	1988	1989	
Industrielle Metallberufe „Alte“ Ausbildungsberufe	51 200	21 400	4 600	2 100	
Neue Ausbildungsberufe <sup>1)</sup>	—	25 800	37 600	38 700	
Zusammen	51 200	47 200	42 200	40 800	- 3,3
Industrielle Elektroberufe „Alte“ Ausbildungsberufe <sup>2)</sup>	18 200	4 400	800	200	
Neue Ausbildungsberufe <sup>1)</sup>	—	13 000	16 300	16 500	
Zusammen	18 200	17 400	17 100	16 700	- 2,3
Zum Vergleich: Alle gewerblichen industriellen Berufe	138 600	129 500	117 100	104 900	- 10,4
Kommunikationselektroniker/in (Deutsche Bundespost) <sup>1)</sup>	5 100	4 800	4 400	4 000	- 9,1
Handwerkliche Metallberufe <sup>3)</sup>	65 200	62 500	58 900	54 500	- 7,5
Handwerkliche Elektroberufe <sup>4)</sup>	19 600	19 200	19 400	19 000	- 2,1
Zum Vergleich: Alle handwerklichen Berufe	225 900	322 600	201 000	184 200	- 8,4
Einzelhandelsberufe Darunter:	48 400	55 100	56 300	48 200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sup>1)</sup>	—	17 200	39 600	34 800	
Einzelhandelskaufmann/Einzelhandelskauffrau Verkäufer/Verkäuferin <sup>5)</sup>	28 000	18 400	—	—	
	20 400	19 500	16 700	13 400	

<sup>1)</sup> Neugeordnet 1987

<sup>2)</sup> Neuabschlüsse ohne Anschlußverträge in der Stufenausbildung

<sup>3)</sup> Neugeordnet 1989

<sup>4)</sup> Neugeordnet 1988

<sup>5)</sup> Bis 1988 unter Abzug derjenigen, die einen Anschlußvertrag für den Einzelhandelskaufmann/die Einzelhandelskauffrau erhalten (Schätzwerte); entspricht Nettozahlen für Verkäufer/Verkäuferinn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striellen Elektrobereich insgesamt vergleichsweise gut gehalten (- 2,3%). Auch die Zahl der Vertragslösungen ist mit 1 000 (6,0%) gering.

Im Handwerk traten 1988 neue Ausbildungsordnungen für sechs Elektroberufe in Kraft. Die Zahl der Auszubildenden hat in diesen Berufen mit 2,1% nur unterdurchschnittlich abgenommen (vgl. Übersicht 22).

Die handwerklichen Metallberufe wurden 1989 neu geordnet. In diesem Bereich, in den 17 Berufe mit rund 170 000 Auszubildenden einbezogen wurden, ist gegenüber dem Vorjahr ein stärkerer Rückgang festzustellen (- 7,5%). Er liegt jedoch immer noch unter der durchschnittlichen Entwicklung der Ausbildungsverhältnisse im Handwerk (- 8,4%). Insbesondere bei den Kraftfahrzeugmechanikern ist ein deutlicher Rückgang auf 70 000 Ausbildungsverhältnisse festzustellen (Mitte der 80er Jahre 94 000).

Bei den Einzelhandelsberufen haben 34 800 Auszubildende einen Vertrag für den dreijährigen Beruf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Dies sind wesentlich mehr Verträge als vor der Neuordnung für den ebenfalls dreijährigen Beruf Einzelhandelskaufmann/Einzelhandelskauffrau (rund 28 000) vorlagen. Nur noch 13 400 Jugendliche werden als

Verkäufer/Verkäuferin ausgebildet gegenüber 20 400 vor der Neuordnung (vgl. Übersicht 22). Damit sind über 70% aller Verträge in den Einzelhandelsberufen dreijährig.

*Rund 10% der Auszubildenden in Großbetrieben*

Im Jahre 1987 wurden 9,8% der Auszubildenden in Betrieben mit mehr als 1 000 Beschäftigten ausgebildet (vgl. Übersicht 23). Dies ergibt eine Auswertung der Arbeitsstatistik, die zusammen mit der Volks- und Berufszählung durchgeführt wurde.

Mehr als die Hälfte der Auszubildenden (56%) hatte 1987 einen Vertrag mit einem Betrieb, in dem bis zu 50 Beschäftigte tätig waren. Im Vergleich zu 1970 hat damit das Gewicht der kleineren Betriebe etwas abgenommen. Damals wurden noch 57% der Auszubildenden in Betrieben mit bis zu 50 Beschäftigten ausgebildet. Frauen werden häufiger (60%) als Männer (52%) in kleineren Betrieben ausgebildet. Allerdings hat sich auch für die Frauen der Ausbildungsanteil der Kleinbetriebe (bis 4 Beschäftigte) von 15% 1970 auf 9% 1987 verringert (vgl. Übersicht 23).

## Übersicht 23: Auszubildende nach Betriebsgrößenklassen im alten Bundesgebiet 1970 und 1987

Arbeitsstätten mit ... bis ... Personen <sup>1)</sup>	Auszubildende in Prozent						
	1970			1987			Ausbildungs- quote
	Insgesamt	Männlich	Weiblich	Insgesamt	Männlich	Weiblich	1987 <sup>2)</sup>
1 bis 4	10,3	7,5	14,9	7,1	5,4	9,2	6,0
5 bis 9	19,2	15,9	24,4	18,6	15,3	22,7	10,2
10 bis 19	14,0	14,3	13,4	15,7	16,0	15,4	9,8
20 bis 49	13,8	15,2	11,5	14,1	15,5	12,3	7,2
50 bis 99	8,8	9,5	7,6	8,7	9,2	8,1	5,8
100 bis 199	8,2	8,4	7,9	8,2	8,5	7,8	5,6
200 bis 499	9,7	9,9	9,4	10,9	10,9	10,9	5,8
500 bis 999	16,0	19,3	10,9	6,8	6,8	6,9	5,9
1 000 und mehr				9,8	12,4	6,7	4,8
<b>Insgesamt</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6,5</b>

<sup>1)</sup> Einschließlich Auszubildende

<sup>2)</sup> Verhältnis der Auszubildenden zu den Beschäftigten in Prozent; bei der Größenklasse 1 bis 4 werden Kleinbetriebe mit bis zu zwei Beschäftigten (einschließlich Auszubildende) nicht berücksichtigt.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Arbeitsstättenzählung 1987;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Die höchsten Ausbildungsquoten (Verhältnis Auszubildende zu Beschäftigten) erreichen Betriebe mit 5 bis 20 Erwerbstätigen. Rund 10% der Beschäftigten sind dort Auszubildende. Diese Betriebe bilden ein Drittel aller Auszubildenden aus. Betriebe mit 20 bis 49 Beschäftigten haben eine Ausbildungsquote von 7,2%. In Großbetrieben mit über 1000 Beschäftigten sind 4,8% der dort Tätigen Auszubildende. Etwa 1% der Auszubildenden werden in Ein-Personen-Unternehmen und -Praxen ausgebildet.

Insgesamt wurden 1987 2,6 Millionen Betriebe, darunter 513000 Betriebe mit Auszubildenden (rund 20%) gezählt. Viele Kleinbetriebe und Praxen mit bis zu 4 Beschäftigten bilden nicht aus. Betriebe mit 5 bis 9 Beschäftigte bilden zu 40% aus. Für die Größenklassen zwischen 10 und 199 Beschäftigten steigt die Ausbildungsquote der Betriebe auf Werte zwischen 50 und 75% an. Unter den Großbetrieben gibt es 13%, die keine Auszubildenden haben.

### 1.3.1.2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Im November 1989 standen 344709 Jugendliche in einer betrieblichen Ausbildung. Gegenüber dem Vorjahr waren dies 37181 Auszubildende (-10,8%) weniger. Seit 1979, als mit 516755 der Höchststand an Auszubildenden erreicht war, geht die Zahl der Auszubildenden demografisch bedingt zurück (vgl. Übersicht 24). Dabei weichen die Rückgänge der Auszubildenden männlicher und weiblicher Jugendlicher nicht wesentlich voneinander ab. Gegenüber 1979 ist ihre Zahl bei den weiblichen Jugendlichen um 81677 und bei den männlichen Jugendlichen um 90191 zurückgegangen. Der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beträgt 41,9%. Damit ist dieser Anteil in den letzten 10 Jahren um 4,7 Prozentpunkte und gegenüber 1988 um 2,2 Prozentpunkte gesunken (vgl. Übersicht 25).

In den Ausbildungsbereichen (Wirtschaftsbereichen) folgten die jährlichen Neuverträge der demografischen Entwicklung und den zentralen Bedarfsplanungen.

Wie Übersicht 26 zeigt, konzentrierte sich die Ausbildung insbesondere von Frauen auf wenige Ausbildungsberufe. Dabei handelt es sich nicht um die bei den Jugendlichen beliebtesten Berufe, sondern um solche, die auf Grund der wirtschaftlichen Planung mit Priorität bedacht wurden. Bei den Männern umfassen die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37,0%, bei den Frauen 50,3% aller Auszubildenden. Diese Anteile blieben in den 80er Jahren nahezu unverändert.

In der Reihenfolge der am stärksten besetzten Berufe hat sich ebenfalls wenig geändert. Allenfalls der Beruf Kraftfahrzeugschlosser hat in den vergangenen fünf Jahren an Bedeutung zugenommen. Mit 4,1% wurde 1989 der bisherige Höchststand erreicht. Der Beruf Instandhaltungsmechaniker weist in den letzten fünf Jahren die deutlich höchsten Bestandszahlen auf (6,1% aller neu abgeschlossen Auszubildungsverträge 1989, Übersicht 27).

Bei den Frauen erzielt der Beruf Fachverkäuferin seit über 5 Jahren die mit Abstand höchsten Anteilswerte. 10,4%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nahmen 1989 eine Ausbildung in diesem Beruf auf (vgl. Übersicht 27).

Die Ausbildung der Abgänger der 8. Klasse konzentriert sich vor allem auf Berufe der Industrie, des Bauwesens und der Landwirtschaft (vgl. Übersicht 28).

Die strukturellen Wandlungen des Jahres 1990 hatten wesentliche Konsequenzen für di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Mit der Entflechtung der Kombinate wurde deutlich, daß die zentralen, an die Kombinate gebundenen Ausbildungskapazitäten, die in der Vergangenheit auch von Auszubildenden anderer Betriebe genutzt wurden (das traf auf etwa jeden dritten Auszubilde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für die kleineren Nachfolgebetriebe erhebliche Übernahmeprobleme aufwarfen. Betriebliche Ausbildungspartner kündigten vielfach ihre Kooperationsverträge mit den bisher ausbildenden Betrieben. Das hatte nicht nur rein finanzielle Ursachen, sondern hing auch mit der großen wirtschaftlichen Unsicherheit der Betriebe hinsichtlich ihrer

**Übersicht 24: Auszubildende insgesamt und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1974 bis 1989<sup>1)</sup>**

Jahr	Auszubildende																	
	Bestand Ins- gesamt	Neue Verträge	Davon im Ausbildungsbereich														Handel und Ver- sor- gung	Gesund- heits- wesen
			Kohle und Ener- gie	Erz- berg- bau Metall und Kali	Chemie	Elek- tronik/ Elek- tro- tech- nik	Schwer- maschi- nen- tech- nik und Anla- genbau	Werk- zeug- und Verar- bei- tungs- maschi- nen	Leicht- indu- strie	Land- maschi- nen und Fahr- zeug- bau	Bezirks- gelei- te Indu- strie	Glas und Kera- mik	Bau- wesen	Ver- kehr	Post- und Fern- melde- wesen	Land- Forst- und Nahr- ungs- güter- wirt- schaft		
Anzahl	Prozent																	
1974	453302	200100	3,2	2,3	4,7	5,8	5,2	1,9	5,5	2,9	4,8	1,0	14,9	8,2	1,5	10,4	9,5	
1976	475205	212324	3,7	2,4	4,7	5,6	5,3	1,8	5,8	3,3	4,8	0,9	16,1	8,8	1,6	11,8	10,7	
1978	509922	221807	3,8	2,5	4,9	6,2	5,4	1,7	5,5	3,7	4,9	0,8	15,2	8,3	1,7	11,6	10,5	
1980	514866	220342	3,8	2,5	4,9	6,5	5,2	1,7	5,6	3,5	3,9	1,3	15,0	8,3	1,7	11,9	10,5	
1982	467813	201230	3,8	2,4	4,8	7,0	4,9	1,9	5,6	3,5	3,8	1,3	13,4	8,4	1,7	13,1	9,9	
1984	426554	180783	3,7	2,3	4,5	6,9	4,7	1,9	5,5	3,5	3,8	1,3	12,8	8,2	1,7	14,3	9,9	
1986	402002	173033	3,6	2,3	4,5	6,9	4,4	1,8	5,5	3,6	3,8	1,3	12,1	8,4	1,6	14,7	10,5	6,4
1988	391890	164100	4,1	2,2	4,4	6,6	3,6	1,8	5,6	3,6	3,8	1,3	11,9	8,9	1,7	14,6	10,4	6,6
1989	344709	125807	4,4	2,1	4,4	6,9	3,5	1,8	5,8	3,5	3,9	1,3	11,7	8,7	1,7	15,2	9,8	6,6

<sup>1)</sup> Ohne Bereich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und Berufsausbildung mit Abitur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Übersicht 25: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an neuen Verträgen in den Ausbildungsbere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1974 bis 1989<sup>1)</sup> in Prozent**

Jahr	Weibliche Auszubildende																
	Ins- gesamt	Davon im Ausbildungsbereich														Handel und Ver- sor- gung	Gesund- heits- wesen
		Kohle und Ener- gie	Erz- berg- bau Metall und Kali	Chemie	Elek- tronik/ Elek- tro- tech- nik	Schwer- maschi- nen- tech- nik und Anla- genbau	Werk- zeug- und Verar- bei- tungs- maschi- nen	Leicht- indu- strie	Land- maschi- nen und Fahr- zeug- bau	Bezirks- gelei- te Indu- strie	Glas und Kera- mik	Bau- wesen	Ver- kehr	Post- und Fern- melde- wesen	Land- Forst- und Nahr- ungs- güter- wirt- schaft		
1974	46,5	1,7	1,4	4,8	5,7	2,9	1,3	9,4	2,0	5,9	1,2	3,3	4,1	1,9	8,4	17,4	
1976	44,5	2,4	1,6	5,5	5,9	3,2	1,4	10,7	2,6	6,5	1,2	4,2	4,5	2,2	10,7	20,3	
1978	44,6	2,3	1,8	5,6	6,6	3,2	1,3	10,3	2,9	6,3	1,2	4,3	4,0	2,3	10,6	20,0	
1980	44,5	2,4	1,8	5,4	6,9	3,2	1,3	10,1	2,8	5,1	1,7	4,6	4,2	2,4	10,4	20,1	
1982	44,5	2,4	1,7	5,5	7,4	2,8	1,4	10,8	2,7	4,0	1,7	4,0	4,5	2,5	11,0	19,1	
1984	43,9	2,6	1,7	5,4	6,9	2,8	1,5	10,8	2,5	4,8	1,6	3,6	4,5	2,6	12,3	19,0	
1986	44,2	2,5	1,5	5,0	6,5	2,6	1,2	10,6	2,6	4,0	1,5	3,5	4,6	2,5	12,2	19,7	7,6
1988	44,1	2,3	1,5	5,0	6,3	2,3	1,3	10,6	2,6	4,1	1,6	3,7	5,0	2,5	11,7	19,6	8,1
1989	41,9	2,5	1,3	4,9	6,6	2,1	1,2	11,4	2,3	4,0	1,6	3,3	4,5	2,7	14,2	19,1	8,2

<sup>1)</sup> Ohne Bereich Zentralverwaltung für Statistik und Berufsausbildung mit Abitur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Übersicht 26: Auszubildende in den fünf, zehn und fünf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n nach Geschlecht 1986 und 1989 (oh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in Prozent**

Jahr	Auszubildende in den ... am stärksten besetzten Berufen					
	Männlich			Weiblich		
	Fünf	Zehn	Fünfzehn	Fünf	Zehn	Fünfzehn
1986	22,9	37,7	47,9	35,7	50,9	59,6
1989	22,9	37,0	47,9	35,4	50,3	59,3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Übersicht 27: Die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nach den Neuverträgen 1989 für männliche und weibliche Auszubildende (oh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Ausbildungsberuf	Aus- bildungs- bereich	Männ- liche Auszu- bildende	Anteil an allen männ- lichen Auszu- bildenden
		Anzahl	Prozent
Instandhaltungsmechaniker	I	4467	6,1
Elektromonteur	Hw	3627	5,0
Kraftfahrzeugschlosser	Hw	3004	4,1
Facharbeiter für Werkzeugmaschinen	I	2989	4,1
Maschinen- und Anlagenmonteur	I	2675	3,7
Landmaschinen- und Traktorenschlosser	Hw	2364	3,2
Facharbeiter für Pflanzenproduktion	Lw	2255	3,1
Tischler	Hw	1976	2,7
Koch	I	1854	2,5
Maurer	Hw	1837	2,5
<b>Insgesamt</b>		<b>27048</b>	<b>37,0</b>

Ausbildungs- bereich	Weib- liche Auszu- bildende	Anteil an allen weib- lichen Auszu- bildenden	
		Anzahl	Prozent
Fachverkäuferin	IH	5474	10,4
Facharbeiterin für Schreibtechnik	IH	4546	8,6
Wirtschaftskauffrau	IH	4221	8,0
Köchin	IH	2413	4,6
Facharbeiterin für Textiltechnik	IH	2002	3,8
Kleidungs-facharbeiterin	IH	1833	3,5
Kellnerin	IH	1721	3,3
Facharbeiterin für Tierproduktion	Lw	1589	3,0
Gärtnerin	Lw	1404	2,7
Friseurin	Hw	1296	2,5
<b>Insgesamt</b>		<b>26499</b>	<b>50,3</b>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Überlebensfähigkeit, der Neuorientierung der Produktion und den künftigen strukturellen Veränderungen der Wirtschaft zusammen. Diese Bedingungen erschwerten es, die Berufsausbildung als Investition in die Zukunft und als Marktvorteil gegenüber anderen Betrieben zu verstehen.

Hinzu kommt, daß nur 28 % der Ausbildungsbetriebe ihre materiell-technischen Voraussetzungen für eine Ausbildung nach den westdeutschen Ausbildungsordnungen — einer jüngsten Untersuchung<sup>1)</sup> zufolge — als ausreichend einschätzten. 42 % bewerteten ihre Voraussetzungen als unzu-

<sup>1)</sup> Analyse über Stellung, Profil und Kapazitäten der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nd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lin 1990

**Übersicht 28: Aufnahme von Schulabgängern der 8. Klasse nach der Rangfolge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Beru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1989**

Facharbeiterberuf	Aufnahmen 8. Klasse			Anteil an Auf- nahmen insgesamt
	Ins- gesamt	Darunter weiblich		
		Anzahl	Prozent	Prozent
Ausbaumaurer	1863	2	0,1	16,3
Betriebsschlosser	986	20	2,0	8,6
Facharbeiter für Viehwirtschaft	806	370	45,9	7,0
Facharbeiter für Acker-/Pflanzenbau	714	43	6,0	6,2
Dreher	624	67	10,7	5,4
Fleischer	456	99	21,7	4,0
Textilfacharbeiter	443	396	83,3	3,9
Montageschlosser	410	44	10,7	3,6
E-Montierer	403	184	45,7	3,5
Gartenbau- facharbeiter	284	208	73,2	2,5
<b>Insgesamt</b>	<b>6989</b>	<b>1406</b>	<b>20,1</b>	<b>61,0</b>

Quelle: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reichend, 30 % hofften, die erforderlichen Voraussetzungen bis zum Beginn des nächsten Ausbildungsjahres 1991/92 schaffen zu können. Für 20 % aller befragten Ausbildungsbetriebe ist die künftige Entwicklung völlig unklar, sie schließen eine mögliche Auflösung der Ausbildungskapazitäten nicht aus.

Als häufigste Begründungen hierfür wurden genannt:

- fehlender Bedarf an Berufen, die angeboten werden könnten
- schlechte Auftragslage des Betriebes
- veraltete Technik und fehlende Investitionsmittel
- fehlende Träger zur Erhaltung von Ausbildungskapazitäten bei Konkurs der Betriebe.

Das bedeutet, daß die Versorgungsprobleme in den neuen Ländern 1991 noch nicht überwunden sein werden, zumal die verlängerte Ausbildungszeit von durchschnittlich zwei auf drei bis dreieinhalb Jahre ab 1. September 1990 die Zahl der Ausbildungsabsolventen und die damit frei werdenden Ausbildungskapazitäten erheblich reduzieren dürfte.

### 1.3.2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 1.3.2.1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schulische Vorbildung wird in der Berufsbildungsstatistik als der zuletzt erreichte allgemeinbildende Schulabschluß ausgewiesen. Sofern vor Antritt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eine berufsbildende Vollzeitschule besucht wurde, wird diese als zuletzt besuchte Schule angegeben.

Die Anteile der Auszubildenden, die vor Ausbildungsbeginn das Berufsgrundbildungsjahr besuchten, gingen im Jahre

In der Fachschulbildung, insbesondere im Fern- und Abendstudium, waren in großem Umfang nebenberufliche Fachschullehrer eingesetzt; so waren 1986 im gesamten Fachschulbereich etwa 10 000 nebenberufliche Fachschullehrer tätig. Der Einsatz war in der Regel auf zwei bis sechs Stunden pro Woche begrenzt.

Der Anteil der Frauen unter den hauptberuflichen Fachschullehrern beträgt etwa 50 %. An medizinischen, pädagogischen und ökonomischen Fachschulen ist der Frauenanteil besonders hoch.

#### Weitere Entwicklung

Grundlage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des Fachschulwesen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der Einigungsvertrag. Danach werden die bei der Neugestaltung des Schulwesens erforderlichen Regelungen vo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eigener Zuständigkeit getroffen. Berufe, für die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auszubilden ist, müssen aus dem Fachschulsystem ausgegliedert werden (z. B. Zahntechniker). Soweit die Ausbildung in Heilhilfsberufen nach Bundesrecht durchzuführen ist (z. B. Krankenschwester, Krankenpfleger), ist die Ausbildung entsprechend dem geltenden Recht zu organisieren.

#### 1.4 Ausbildungsverhalten von Schulabgängern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Zur Abschätzung des Nachfrage- und Bildungsverhaltens von Schulabgängern wurden im Oktober 1990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schriftliche Repräsentativerhebungen durchgeführt. Befragt wurden rund 24 000 Schüler in den Abgangsklassen der allgemeinbildenden und berufsbildenden Schulen, 17 000 aus dem westdeutschen und 7 000 aus dem ostdeutschen Bundesgebiet.

Die Erhebungsergebnisse aus den beiden Ländergruppen sind aus zwei Gründen nicht vergleichbar. Einerseits ist der Informationsstand der Schüler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über die Palette der neuen Ausbildungsberufe, über schulische und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sowie über die Arbeitsmarktchancen von Berufsqualifikationen noch sehr gering. Deshalb sind die Aussagen der befragten Schüler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nicht als Spiegelbild konkreter Berufspläne, sondern eher als ein aus den Unwägbarkeiten des Augenblicks entstandenes Meinungsbild zu werten. Dafür spricht, daß die Befragten häufig mehrere Ausbildungsalternativen als für sie mögliche Bildungswege angegeben haben und bei ihnen wesentlich stärker als in der westdeutschen Befragung Unsicherheiten über die Realisierungsmöglichkeiten ihrer Wünsche zum Ausdruck kommen. Andererseits dürften sich in den neuen Ländern auch Veränderungen in den Schulpflichtregelungen ergeben. Dies betrifft insbesondere das vorzeitige Verlassen der Schüler aus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POS). Aufgrund dieser Einschränkungen sind die Befragungsergebnisse aus den neuen Ländern als erste Orientierungen zu den künftigen Ausbildungswegen von Jugendlichen zu werten.

In die Schülerbefragung wurden über alle neuen Bundesländer hinweg rund 350 Schulen einbezogen. Die Erhebung erstreckte sich auf

- 360 Schüler aus den 8. Klassen der Hilfsschulen
- 700 Schüler aus den 8. Klassen der POS
- 4 600 Schüler aus den 10. Klassen der POS
- 1 100 Schüler aus den 12. Klassen der EOS sowie
- 330 Schüler aus Berufsvorbereitungs- und Berufgrundbildungsjahr.

Das Verhältnis der weiblichen zu den männlichen Schülern betrug 52 % zu 48 %. Die Erhebung ist repräsentativ für das Gebiet der früheren DDR. Die Befragung wurde unter aktiver Beteiligung von Klassenlehrern schriftlich abgewickelt.

Einen herausragenden Platz nimmt die Lehrstellenknappheit in den Lehrerberichten ein. Zum Befragungszeitpunkt waren mindestens die Hälfte aller Schüler noch ohne konkrete Aussicht auf einen Ausbildungsplatz. Das galt vor allem für Hilfsschüler, deren Bewerbungen fast ausschließlich abschlägig von den Betrieben beschieden wurden.

Die Ursachen des Angebotsrückgangs sind nach Auffassung der Lehrer von Konkursen geprägt, aber auch von der abwartenden Haltung vieler Betriebe, die ihr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noch nicht übersehen können. Dagegen wächst das Ausbildungsstellenangebot von Handwerksbetrieben nur langsam. Lediglich in den früheren westlichen Randgebieten der neuen Länder wird die Ausbildungsstellen-situation durch westdeutsche Angebote entlastet.

Nach Auskunft der Lehrer sind Schüler, Lehrer und Eltern über Bildungswege und neue Berufe sowie über schulische und betriebliche Ausbildungsgänge nur unzureichend informiert. Die Zusammenarbeit mit den Arbeitsämtern wird unterschiedlich beurteilt, sie verbessert sich zunehmend. Vielfach hatten die Arbeitsämter zunächst kein einschlägiges Informationsmaterial; freie Ausbildungsplätze wurden ihnen überdies nur teilweise gemeldet.

Deutlich spürbar im Bewerberverhalten sind Mutlosigkeit und Unsicherheit. So geben viele Schüler ihre Bewerbungen bereits nach zwei Absagen auf.

Die Studienwünsche der Schüler in den 12. Klassen der EOS werden nach Aussagen der Lehrer, mit vergangenen Jahren verglichen, tendenziell zugunsten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zurückgenommen. Inwieweit diese Entwicklung stabil ist, läßt sich nicht abschätzen.

Das Wissen der Schüler über die Ausbildungsmöglichkeiten in de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und über die Berufe des dualen Systems ist sehr gering. Die Frage, wie gut sie über das BGJ und BVJ informiert sind, haben 50 % mit „gar nicht“ beantwortet. 39 % fühlten sich „weniger gut“ und nur 11 % „gut“ informiert. Erhebliche Informationslücken gibt es auch bei den neuen Ausbildungsberufen: 43 % der Befragten gaben an, „gar nicht“ informiert zu sein, 52 % „nicht ganz ausreichend“, lediglich 5 % hielten sich für „ausreichend“ unterrichtet.

Auffallend waren markante Unterschiede zwischen den Schulformen. Die Schüler des BVJ/BGJ und der 10. Klasse POS sind besser informiert als die zukünftigen Abiturienten und die Hilfsschüler.

Zum Zeitpunkt der Befragung hatte nur jeder dritte sich mit seinem Berufswunsch an das Arbeitsamt gewandt; 51% hatten dies noch vor und 15% hielten dies nicht für nötig, darunter viele zukünftige Abiturienten mit Studienwunsch. Interesse an einer dualen Ausbildung haben über 80% der befragten Schüler.

Zum Zeitpunkt der Befragung hatten sich 11% der Schüler schon mit Erfolg um eine Lehrstelle beworben. Weitere 34% hatten noch keinen Erfolg. 43% hatten die Bewerbung noch vor sich. Der Rest (11%) hatte keine Bewerbung vor. Der Bewerbungsvorgang war bei den BVJ/BGJ-Schülern am weitesten (18% „nein, noch nicht“) und in der 8. Klasse POS am wenigsten (85% „nein, noch nicht“) fortgeschritten.

*Ausbildungs- und Berufswünsche von Schülern in westdeutschen Bundesländern im Herbst 1990*

Im alten Bundesgebiet haben sich 17000 Schüler in Abgangsklassen allgemeinbildender und berufsbildender Schulen an der Befragung beteiligt; rund 5000 aus Rheinland-Pfalz und je 6000 aus Niedersachsen und Nordrhein-Westfalen.

*Angestrebte Berufsausbildung nach Ende des Schuljahres*

Die Schüler wurden danach befragt, was sie nach dem Ende des Schuljahres planen. Zur Wahl standen verschiedene Alternativen für den Ausbildungsstart. Auch Mehrfachnennungen waren möglich.

Schließt man diese aus, entschieden sich 87% der Schüler für eine der folgenden Möglichkeiten:

- eine Lehre 52%
- berufliche Schulen (BVJ, BGJ, BFS) 6%
- eine andere Ausbildung (als Beamter, Assistent etc.) 7%
- eine allgemeinbildende Schule 7%
- eine Fachhoch- oder Hochschule 7%
- sonstiges (Arbeit, Wehr-/Zivildienst etc.) 8%.

Weitere 13% der befragten Schüler konnten sich nicht eindeutig entscheiden und gaben mehrere Alternativen an, insbesondere Kombinationen mit einer Lehre. Ein Drittel davon entfiel allein auf die Kombination: Lehre und berufliche Schule. Faßt man alle Lehre-Nennungen (einschließlich der entsprechenden Mehrfachnennungen) zusammen, zeigten sich fast zwei Drittel (63%) der Schüler an einer Lehre interessiert.

Differenziert man diese Quote von 63% nach der Schulform der Schüler, so erhält man

- für die Sekundarstufe I eine Quote von 73%,
- für die Sekundarstufe II eine Quote von 23% und
- für die beruflichen Schulen eine Quote von 78%.

Die Übersicht 51 zeigt die Struktur der angestrebten Übergänge der männlichen und weiblichen Schüler unmittelbar im Anschluß an die derzeit besuchte Schule nach dem erreichten schulischen Abschluß (ohne Mehrfachnennungen).

**Übersicht 51: Angestrebte Übergänge nach Schulende in Abhängigkeit vom schulischen Abschluß und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90 in Prozent**

Art des Übergangs/Geschlecht	Sonder-Schule	Haupt-Schule	Real-Schule	Abitur	BVJ	BGJ	BFS
Lehre							
Männlich	54	72	73	20	83	93	76
Weiblich	47	59	62	29	68	77	68
Berufliche Schulen							
Männlich	30	13	10	—	—	—	—
Weiblich	31	20	15	—	—	—	—
Andere Ausbildung							
Männlich	—	.	4	3	.	3	9
Weiblich	—	6	9	9	10	18	24
Allgemeine Schule							
Männlich	10	10	11	—	.	.	6
Weiblich	11	11	12	—	.	.	5
Studium							
Männlich	—	—	—	28	—	—	.
Weiblich	—	—	—	51	—	—	.
Keine Ausbildung							
Männlich	6	3	2	49	12	.	6
Weiblich	11	4	2	11	19	.	3
<b>Summe</b>							
Männlich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Weiblich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 = Fallzahlen zu gering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Die schulabschluß- und geschlechtsspezifischen Unterschiede im angestrebten Direktübergang in eine duale Ausbildung sind beträchtlich. Von den Absolventen der Sonderschulen suchte zunächst nur jeder zweite eine Lehrstelle. Die übrigen waren größtenteils an einer Chancenverbesserung durch den Besuch einer beruflichen Vollzeitschule oder einer allgemeinbildenden Schule interessiert.

Die Quote der weiblichen Sonderschüler, die zunächst auf eine Berufsausbildung verzichten, ist fast doppelt so hoch wie die der männlichen (11% gegenüber 6%). Nach dem Besuch des BVJ steigt die Übergangsquote bei den männlichen Schülern auf 83% und bei den weiblichen auf 68% an.

Das Übergangsverhalten von Haupt- und Realschülern nach Schulende unterscheidet sich nicht sehr: Der direkte Übergang in die Lehre liegt bei männlichen Schülern um 72% und bei den jungen Frauen um 60%, der Übergang in berufliche Schulen liegt bei 12% bzw. 17%, der in allgemeinbildenden Schulen bei 10% bzw. 11%.

Obwohl die Wunschquoten für den Direktübergang ins duale System zwischen den Sonderschülern und den Haupt- und Realschülern zunächst weit auseinander liegen, dürfte sich das Interesse von Sonderschülern an einer Lehre nach dem Besuch des BVJ oder BGJ dem der Haupt- und Realschüler stark annähern.

Die Unterschiede im Direkt-Übergang von Abiturienten erklären sich durch den Militär- und Zivildienst der in der Kategorie „keine Ausbildung“ (Männer: 49%, Frauen: 11%) erfaßt ist.

Absolventen von mehrjährigen Berufsfachschulen haben zum Teil einen zur dualen Ausbildung vergleichbaren Berufsabschluß. Infolgedessen ist die Häufigkeit des anschließenden Lehrstellenwunsches deutlich geringer als nach einem BVJ oder BGJ. Von großer Bedeutung für die weiblichen Absolventen des BGJ und der Berufsfachschulen ist mit 18% bzw. 24% der Befragten die Übergangskategorie „Andere Ausbildung“, in welcher die Beamtenausbildung, Assistentenberufe und Berufe des Gesundheitswesens zusammengefaßt wurden.

#### Angestrebte Ausbildungsberufe

Die landwirtschaftlichen und Ernährungsberufe sind über alle Schulformen hinweg etwa gleich häufig vertreten. Die

Metall- und Elektroberufe werden vor allem von männlichen Haupt- und Realschülern und Schülern beruflicher Vollzeitschulen gewählt. Die Bauberufe sind eine Domäne der männlichen Sonder- und Hauptschüler. Bei den Kaufleuten dominieren weibliche Haupt- und Realschüler, Abiturienten und Absolventen beruflicher Vollzeitschulen. Der Friseurberuf und die Helfer- und Hauswirtschaftsberufe werden vor allem von weiblichen Nicht-Abiturienten nachgefragt. Damit folgt die Struktur der Wunschberufe auch 1990 dem traditionellen Nachfragemuster (vgl. Übersicht 52).

### 1.5 Vorausschätzung der Nachfrage 1991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In der Vorausschätz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wird nach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unterschieden. Der dazu entwickelte Verfahrensansatz stützt sich auf Schulabgängerprognosen und auf geschätzte Übergangsquoten. Während sich die Methode im alten Bundesgebiet über Jahre hinweg bewähren konnte, ist sie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noch unerprobt. Die für das kommende Jahr prognostizierte Ausbildungsplatznachfrage ist deshalb als grober Richtwert zu verstehen.

#### Alte Bundesländer

Die Gesamtnachfrage setzt sich aus den direkten und indirekten Einsteigern ins duale System zusammen. Die ersteren wollen unmittelbar nach dem Schulende, die zweiten erst nach dem Besuch einer beruflichen Vollzeitschule oder nach dem Wehr- und Zivildienst einen Ausbildungsvertrag abschließen. Beide Nachfragergruppen zusammen dürften 1991 eine Nachfrage nach Ausbildungsstellen von etwa 540 000 ergeben. Die Annahmen für diese Schätzung lauten wie folgt:

Die Zahl der Schulabgänger aus der Sekundarstufe I wird 1991 etwa 465 000 betragen und damit um knapp 20 000 geringer sein als 1990 (1989: 512 000, 1988: 565 000, vgl. Tabelle 1/5). Nach einer Schulabgängerbefragung, die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m Oktober 1990 durch-

Übersicht 52: Angestrebte Berufe nach schulischem Abschluß und Geschlecht im alten Bundesgebiet 1990

Berufsbereich	Sonder- schule	Haupt- schule	Real- schule	Abitur	Beruf- liche Schulen	Männ- lich	Weib- lich
Landwirtschaftliche Berufe	8	5	2	2	6	5	5
Metall-/Elektroberufe	18	26	22	4	21	37	2
Bauberufe	25	16	4	3	11	18	2
Ernährungsberufe	9	6	3	3	4	4	5
Kaufleute	6	14	32	52	27	17	36
Friseur/Helfer und Hauswirtschaft	14	14	18	8	14	5	24
Sonstige	4	9	11	15	9	7	13
Noch unentschieden	16	10	8	13	9	7	13
<b>Summe</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b>100</b>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geführt hat (vgl. Kapitel 1.4), wollten etwa 73 % bzw. 339 000 der SEK I-Schüler ins duale System übergehen. 55 % wollten dies direkt im Anschluß an die zur Zeit besuchte Schule tun, 18 % hatten neben der Lehre auch andere Bildungsalternativen genannt. Es wird unterstellt, daß im Falle der Wahl die Entscheidung der Jugendlichen überwiegend zugunste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ausfällt, so daß die für die Nachfragevorausschätzung relevante Übergangsquote bei etwa 67 % oder 312 000 Jugendlichen liegen dürfte.

In den beiden Jahren 1989/90 und 1990/91 verlassen durchschnittlich 240 000 Schüler die Sekundarstufe II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n (einschließlich Fachoberschulen und Fachgymnasien). Der Anteil derjenigen mit Interesse an ein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liegt bei 65 000 oder 27 %; 23 % wollen direkt nach Schulende eine duale Ausbildung beginnen; ein weiterer Anteil kommt aus früheren Abgangsjahren, überwiegend nach der Wehr- und Zivildienstzeit.

Die Zahl der 1991 zu erwartenden Schulabgänger aus beruflichen Vollzeitschulen dürfte insgesamt rund 200 000 betragen:

- Im schulischen BGJ gab es 1989 noch über 40 000 Schüler (1988 50 000); 1990 sind 30 000 Schüler zu erwarten, die 1991 Schulabgänger sein werden.
- Die entsprechenden Zahlen des Berufsvorbereitungsjahres, die im Gegensatz zum BGJ nur sehr langsam kleiner werden, lauten: Schüler 1987 und 1988 je 25 000, 1989 und 1990 gut 20 000. 1991 ist somit mit 20 000 Schulabgängern aus dem BVJ zu rechnen.
- Im ersten Schuljahr an Berufsfachschulen wurden 1987 195 000 und 1988 182 000 Schüler gezählt. Bis 1989/1990 könnte die Eingangsklassenstärke auf ungefähr 150 000 zurückgehen. Diese Schüler verlassen die Berufsfachschulen größtenteils 1991. Sie haben dann nur zu einem kleineren Teil eine vollqualifizierende Ausbildung erhalten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Seite 48 ff).

Die überwiegende Mehrheit dieser Schulabgänger sucht nach einer Anschlußausbildung im dualen System. Etwa 78 %, davon 72 % direkt nach der zur Zeit besuchten Schule und weitere 6 % in Kombination mit anderen Bildungsmöglichkeiten, streben eine Lehre an. Die Entscheidung wird auch hier überwiegend zugunsten der Lehre ausfallen, so daß mit einer Übergangsquote von 76 % (beim BVJ und BGJ mehr, bei den Berufsfachschulen weniger) bzw. mit einer Nachfrage von 152 000 Absolventen der beruflichen Schulen nach ein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gerechnet wird.

Schwer abzuschätzen sind die Größenordnungen der Zuwanderer und Ausbildungspendler aus den neuen Ländern. In der Berufsberatungstatistik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finden sich Hinweise, daß die Zahl der gemeldeten Bewerber in den Arbeitsamtsbezirken im Einzugsbereich der neuen Länder um 10 000 bis 12 000 höher liegt als bei einer Bewerberentwicklung, die in den übrigen Arbeitsamtsbezirken festgestellt werden konnte. Es spricht viel dafür, daß auch für 1991 eine ähnlich hohe Nachfrage aus den neuen Ländern zu erwarten sein wird.

Die rechnerische Schätzung von gerundet 540 000 Ausbildungsplatzbewerber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etzt sich folglich zu 68 % aus direkter, zu 30 % aus indirekter oder zeitlich verzögerter Nachfrage und aus 2 % zuwandernden und einpendelnden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zusammen.

Die Einführung der längeren Schulpflich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ird einen Rückgang der Schulabgängerzahl zur Folge haben; Abgänger aus den 8. und früheren Klassenstufen der POS und der Hilfsschulen wird es nicht mehr geben. Es wird unterstellt, daß Abgänge aus der 9. Klasse grundsätzlich möglich, jedoch nicht die Regel sind, und zwar in Höhe der langjährigen Abgangsquote von Schülern der 8. Klasse (POS), die bei rund 6 % der Schüler lag. Die Nachfragevorausschätzung für 1991 stützt sich auch bei den neuen Bundesländern auf eine im Herbst 1990 durchgeführte Schülerbefragung (vgl. Kapitel 1.4). Der rechnerische Schätzwert von mindestens 130 000 Bewerbern basiert auf folgenden Annahmen:

1991 wird es laut Schülerstatistik in der 9. Klasse 170 000 Schüler, in der 10. Klasse 152 000 und in der 12. Klasse 20 000 Schüler geben. 6 % der Schüler aus der 9. Klasse, das sind 10 000 Schulabgänger, verlassen die Hilfsschulen und Polytechnischen Oberschulen und werden sich — unter realistischer Einschätzung der Ausbildungsstellen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 in der überwiegenden Mehrheit (8 000) um einen vollzeitschulischen Ausbildungsplatz im BVJ oder BGJ bemühen müssen.

Weitere 108 000 Nachfrager oder 71 % der Schüler kommen aus den Klassenstufen 10. Ferner wird vermutet, daß etwa 4 000 Schüler nach Beendigung der 12. Klasse der Erweiterten Oberschule einen Ausbildungsplatz nachfragen werden.

Die Zahl der direkt nachfragenden Schulabgänger erreicht 1991 114 000. Die Zahl der indirekten Einsteiger aus dem BVJ und BGJ sowie aus den 1990 durchgeführten AFG-Fördermaßnahmen dürfte bei rund 15 000 liegen.

Etwa 10 000 bis 15 000 Bewerber dürften nach einer Ausbildungsstelle in den alten Ländern suchen. Die Zahl der in den neuen Ländern zu versorgenden Jugendlichen dürfte daher insgesamt eine Größenordnung von ungefähr 120 000 erreichen. In dieser Zahl sind keine Konkurslehrlinge enthalten, für deren Abschätzung es keine Anhaltspunkte gibt.

Insgesamt ist daher für 1991 mit einer Ausbildungsplatznachfrage von mindestens 660 000 zu rechnen. Nicht eingerechnet ist dabei eine unbekannte Zahl von Auszubildenden in den neuen Ländern, die einen anderen Ausbildungsplatz brauchen, weil ihr Ausbildungsbetrieb in Konkurs gegangen ist.

## 2. 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 *Probleme der Datenvergleichbarkeit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Die Analyse der regionalen Ausbildungsstellensituation muß zwischen west- und ostdeutschen Regionen unterscheiden. Ein Strukturvergleich ist aus mehreren Gründen noch nicht möglich. Das hängt einmal mit den verschiedenen Erhebungsverfahren für die neuen Ausbildungsverträge zusamm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folgte die Erhebung bei den zuständigen 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satzweise über eine Befragung der Berufsschulen

Nach dem Wunsch der Sozialpartner soll mit dem Inkrafttreten des neuen Berufes die bisherige zweijährige Ausbildung zum Verkäufer/zur Verkäuferin abgelöst werden. Aus der Sicht der Bundesressorts ist dabei allerdings darauf zu achten, daß auch in Zukunft ausreichende Wahl- und Differenzierungsmöglichkeiten für die unterschiedlichen Qualifizierungsbedürfnisse im Einzelhandel sowie die verschiedenen Begabungen und Neigungen der Jugendlichen gesichert werden. Die zuständigen Bundesminister bemühen sich gemeinsam mit den Sozialpartnern, hier geeignete Lösungen zu finden. Auf dieser Grundlage soll das Antragsgespräch vorbereitet werden.

#### 4.1.2.2 Überprüfungen von Ausbildungsordnungen, die in den 70er Jahren erlassen wurden

Auf Grund der zwischenzeitlichen wirtschaftlichen, techn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stehen vier große kaufmännische Ausbildungsberufe zur Neuordnung an:

- Bankkaufmann/Bankkauffrau (Erlaß 1979; 1989 insgesamt 54 029 Ausbildungsverhältnisse), einschließlich Sparkassenkaufmann/Sparkassenkauffrau (gilt nur in Niedersachsen; Erlaß 1951; 1989 insgesamt 2 767 Ausbildungsverhältnisse);
- Versicherungskaufmann/Versicherungskauffrau (Erlaß 1977; 1989 insgesamt 13 598 Ausbildungsverhältnisse);
- Industriekaufmann/Industriekauffrau (Erlaß 1978; 1989 insgesamt 64 032 Ausbildungsverhältnisse);
- Kaufmann/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Erlaß 1979; 1989 insgesamt 49 235 Ausbildungsverhältnisse).

Die Vertreter der Länder haben entsprechende Projektanträge in den Koordinierungsausschuß eingebracht.

Beim Ausbildungsberuf Bankkaufmann/Bankkauffrau ist vorgesehen, das Ergebnis des vom Hauptausschuß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instimmig beschlossenen Forschungsprojekts zur Vorbereitung der Neuordnung abzuwarten, dessen Laufzeit im 1. Quartal 1991 endet. Die Diskussion über die übrigen drei Projektanträge ist noch nicht abgeschlossen.

#### 4.2 Zur Angleichung der Berufsausbildung der neuen Bundesländer und Berlin (Ost) an die Ausbildungsordnungen des alten Bundesgebietes

Entsprechend de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vom 18. Mai 1990 erfolgte auch im Bereich der Berufsbildung eine Übernahme der westdeutschen Gesetzgebung. Die entscheidenden Gesetze für die zukünftige Durchführung der Berufsbildung verabschiedete die Volkskammer der ehemaligen DDR am 12. und 19. Juli 1990.

Mit den Inkraftsetzungsgesetzen für das Berufsbildungsgesetz und die Handwerksordnung sowie dem Berufsschulgesetz wurden die Grundlagen für die Ausbildung in den staatlich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geschaffen. Übergangsregelungen wurden eingeräumt für den Fall, daß die Durchführung der Ausbildung nach den neuen Vorschriften nicht möglich ist oder der Jugendliche eine Fortsetzung der bisherigen Ausbildung ausdrücklich wünscht.

Obwohl die Umstellung der Berufsausbildung eine große Herausforderung für die Berufsbildungspraxis bedeutete, entschied sich die Volkskammer für eine schnelle Umstellung im Interesse einer baldmöglichen gleichwertigen 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Unterstütz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wurden zahlreiche Hilfen angeboten. Dazu gehörten

- Hilfen der Bundesregierung bei der Bereitstellung der Gesetzeswerke, der Ausbildungsordnungen, Rahmenlehrpläne und von Lehrmaterialien;
- umfangreiche Fördermaßnahmen von Seiten der westdeutschen Arbeitgeber- und Arbeitnehmerorganisationen sowie der Länderregierungen und der zuständigen Stellen für Berufsbildung;
- gemeinsame Veröffentlich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BIBB) und des Zentralinstituts für Berufsbildung (ZIB) zur Erleichterung der Arbeit mit den neuen Ausbildungsmaterialien und nicht zuletzt
- die zahlreichen Direktkontakte und der Austausch von Erfahrungen in der Bildungsarbeit zwischen Leitern, Lehrern und Ausbildern von Ausbildungsstätten und Berufsschulen.

Nach einer gemeinsamen Umfrag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und des Zentralinstituts für Berufsbildung<sup>1)</sup> haben rund 80 % aller Betriebe die Ausbildung nach den neuen Ausbildungsordnungen umgestellt.

Aufschlußreich sind allerdings auch die Begründungen, warum die Umstellung auf die Ausbildung in den anerkannten Berufen noch nicht erfolgt ist, wobei die angegebene Reihenfolge keine Rangfolge darstellt:

- fehlende Ausbildungsordnungen
- Beenden der Ausbildung für Abgänger der 8. Klasse wegen zu hoher Anforderungen beim Wechsel auf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fehlende materiell-technische Voraussetzungen
- Wunsch der Lehrlinge
- die Ausbildung erfolgt in einem in der Bundesrepublik nicht anerkannten Ausbildungsberuf
- das Gesetz räumt Möglichkeit der Ausbildung nach ehemaligem Recht ein
- die Lehrkräfte sind nicht ausreichend geschult
- fehlende Einsatzbereitschaft der Berufsschulen und ungenügende Flexibilität von Kooperationsbetrieben
- mangelnde Unterstützung durch die Kammern.

Die Schwierigkeiten und Folgen der Umgestaltung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lassen sich aus den bislang vorliegenden statistischen Angaben nur grob andeuten. Wesentliche Auswirkungen ergeben sich aber bereits aus der generell längeren Ausbildungsdauer (statt in der Regel zwei, zukünftig drei bis dreieinhalb Jahre) für die Mehrzahl der Berufe. Der unbestrittene Vorzug der Ausbildungszeitverlängerung liegt vor allem in dem Zeitgewinn für eine durchweg solidere Ausbildung beruflich-praktischer Fertigkeiten.

<sup>1)</sup> Analyse über Stellung, Profil und Kapazitäten der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1990

Hinzu kommt ein grundlegend neues Verständnis zum Inhalt und zu den Methode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in allen neu geordneten Berufsfeldern, das besonders im Zusammenspiel von Grundausbildung, Fachausbildung und Spezialausbildung nach Fachrichtungen zum Teil weit über das hinausgeht, was in den Grundberufen der ehemaligen DDR an Berufsqualifikationen angestrebt wurde. Dies gilt auch für die zu vermittelnden Schlüsselqualifikationen. Defizite sind auch im kaufmännischen Bereich sowie im Bereich der Anwendung neuer Technologien, von der breiten Nutzung der CNC-Technologien bis hin zur modernen Bürotechnik, zu überwinden.

Alle Hinweise aus der Bildungspraxis weisen darauf hin, daß die Probleme der Umstellung in den verschiedenen Berufsfeldern ein unterschiedliches Ausmaß haben werden. Mit der Ablösung der Planwirtschaft durch die soziale Marktwirtschaft ist die Ausbildung in allen kaufmännischen Berufen vollständig zu verändern. Hier ist der Mangel an qualifizierten Lehrern und Ausbildern auch besonders groß.

Bei den neu geordneten Metall- und Elektroberufen erscheint die Situation schon etwas günstiger, wengleich der größere Umfang an Kenntnissen und Fertigkeiten in der Steuerungstechnik und CNC-Ausbildung auch hier den Lehrern und Ausbildern eine umfangreiche Fortbildung abverlangt. Andererseits beinhalten die Fachrichtungen des Werkzeugmechanikers, des Zerspanungsmechanikers oder auch des Energieelektronikers zu gut 70% traditionell geprägte Berufsinhalte, die auch in den ostdeutschen Facharbeiterberufen vorzufinden sind und mit der letzten Lehrplanveränderung zudem auf neue Technologien umgestellt wurden.

Als weniger problematisch eingeschätzt wird auch der „Umstieg“ bei Bedienerberufen in der Textil-, Lebensmittel- und Getränkeindustrie, bei Berufen für die Montage von Maschinen, Anlagen und Geräten wie — abgesehen von der Problematik des Umweltschutzes — auch bei den Berufen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Sicher lassen sich zahlreiche weitere Berufe nennen, die auf Grund der gemeinsamen Tradition betrieblich orientierter Berufsausbildung ohne nennenswerte Schwierigkeiten nach neuen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n ausgebildet werden können.

Problematisch sind dagegen die zum Teil schlechten Ausbildungsbedingungen, die jahrelange Vernachlässigung der Bausubstanz, der Mangel an moderner materiell-technischer Ausstattung für Lehrwerkstätten wie auch das Fehlen von Lehrbüchern und Lehrmaterialien. Zusätzlich erschwert wird die Situation durch den Abbau von Ausbildungskapazitäten bzw. die Schließung von 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Von rund 200 befragten Ausbildungsstätten (auch ehemalige Betriebsberufsschulen) schätzt nur jede dritte die Ausbildungsbedingungen für die neuen Berufe als ausreichend ein, die übrigen Betriebe sehen sich für eine Ausbildung in den neuen Berufen nicht in der Lage oder wollen hierfür erst bis 1991/92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geschaffen haben.

#### *Veränderungen in der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Mit dem Übergang zum dualen System veränderte sich grundlegend die Kooperation bzw. Aufgabenteilung zwischen Schule und Betrieb. Für die Berufsschullehrer bedeutete das den Abschied von den seit 1952 für Theorie und

Praxis gemeinsam verfaßten Ausbildungsunterlagen. An ihre Stelle treten die Rahmenlehrpläne der KMK sowie zukünftig die Lehrpläne der Länder.

Die mit dem Berufsschulgesetz veranlaßte Umwandlung der Betriebsberufsschulen in kommunale Berufsschulen scheint nach allen vorliegenden Berichten relativ schnell und mit wenig Problemen vollzogen worden zu sein. In allen neuen Ländern ist außerdem eine Erweiterung der Aufgaben der Berufsschulen durch die zusätzlichen einjährigen Bildungsgänge erfolgt. Damit konnten rund 8 000 schulische Ausbildungsplätze bereitgestellt werden.

Ein Hauptproblem der Berufsschulen besteht darin, daß für praktische Demonstrations- und Unterrichtsphasen kaum ausreichende Voraussetzungen gegeben sind. Die notwendigen materiell-technischen Ausstattungen sind kaum vorhanden, die Berufsschullehrer auf die neue Aufgabe ungenügend vorbereitet. Hinzu kommt, daß mit der neuen Aufgabenteilung der beiden Lernorte Schule und Betrieb zugleich neue Kooperationsanforderungen entstehen.

#### *Fortbildung der Lehrer und Ausbilder*

Neben den genannten zahlreichen verwaltungstechnischen und schulorganisatorischen Aufgaben bei der Angleichung an die westdeutschen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 bleibt die Fortbildung der Berufsschullehrer und Ausbilder eine Schwerpunktaufgabe der nächsten Zeit.

Die Lehrkräfte verfügen über eine solide fachliche und berufspädagogische Ausbildung. Auch die Ausbilder hab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n berufspädagogischen Abschluß (vgl. **Kapitel 7.1.2**). Was ihnen fehlt, sind zusätzliche Fachkenntnisse in den auszubildenden Berufen, insbesondere auf kaufmännischem Gebiet, der neuen Technologien und auf verschiedenen Spezialgebieten wie CNC-Technik. Hinzu kommen ein neues Verständnis in der rechtlichen Handhabung der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 und vor allem ein Umdenken in den Prüfungsanforderungen.

Neue Anforderungen bestehen außerdem im didaktisch-methodischen Bereich. Dabei können Erfahrungen bei der Ausbildung in der Lehrwerkstatt, in Betriebsabteilungen und in anderen Organisationsformen genutzt werden; handlungsorientiertes Lernen war bereits seit einigen Jahren ein Schwerpunkt der Ausbilderfortbildung.

Von westdeutscher Seite hat es für die Fortbildung des Ausbildungspersonals breite Unterstützung gegeben, die noch für geraume Zeit benötigt wird.

### **4.3 Betriebliche Ausbildungsgestaltung in ausgewählten Berufen des Handwerks und von Industrie und Handel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m Jahre 1987 durchgeführte repräsentative schriftliche Erhebung zur Gestaltung der Ausbildung in über 4 000 Ausbildungsbetrieben von Industrie, Handel und Handwerk<sup>1)</sup> wurde 1989 durch

<sup>1)</sup> Damm-Rüger, S./Degen, U./Grünwald, U. u. a.: Zur Struktur der betrieblichen Ausbildungsgestaltung. Ergebnisse einer schriftlichen Befragung in Ausbildungsbetrieben von Industrie, Handel und Handwerk. (Sicherung und Steigerung der Qualität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 Band I.) Berichte zur beruflichen Bildung, Heft 101, Berlin und Bonn 1988.

aufgaben sowie die Lehrgangsentwicklung und Mediengestaltung. Dies erfordert nicht nur einen erhöhten Zeitaufwand, sondern auch die notwendigen Fachkenntnisse, welche ohne eine systematische Weiterbildung nicht zu erreichen sind.

Die Weiterbildungszeiten liegen daher mit etwa drei Wochen pro Ausbilder und Jahr deutlich höher als in früheren Jahren. Die Personalausstattung der ÜBS ist hierauf noch nicht hinreichend vorbereitet. Fehlende Stellen haben spürbare Personalengpässe zur Folge, die durch den Einsatz von Honorarkräften nur zum Teil ausgeglichen werden können. In den untersuchten ÜBS wurden ca. 45 % der NT-Lehrgänge von Honorarkräften durchgeführt. Der häufige Personalwechsel bei Honorarkräften wird als Hindernis für eine fachgerechte Wartung der komplizierten NT-Werkstatteinrichtungen gesehen.

Bei den festeingestellten Ausbildern kann eine tendenzielle Veränderung in der Qualifikationsstruktur beobachtet werden. So wird bei den ÜBS-Ausbildern für Technologiebereiche, wie z. B. CAD/CAM, der übliche Meisterabschluß nicht mehr uneingeschränkt als ausreichend angesehen. Vereinzelt werden für die genannten neuen Aufgabengebiete Fachkräfte mit (Fach-) Hochschulabschluß eingestellt.

#### *Management*

Mit 52 % entfällt der überwiegende Anteil der NT-Lehrgänge auf die fachtechnische Fortbildung. Damit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ein neuer Schwerpunkt im Lehrgangsangebot entwickelt, mit dem sich die ÜBS stärker als bisher in eine Marktkonkurrenz zu anderen Anbietern beruflicher Weiterbildungsmaßnahmen begeben haben. Aus diesem Grund gehört eine gezielte Öffentlichkeitsarbeit verbunden mit Marketing-Strategien bei einzelnen ÜBS bereits zum festen Bestandteil der zunehmenden Managementaufgaben von ÜBS-Leitern.

Die Anforderungen bei der Entwicklung von NT-Lehrgangskonzepten hat in den meisten der untersuchten ÜBS zu neuen Ansätzen und Organisationsstrukturen bei der Kooperation mit anderen ÜBS sowie Betrieben geführt. Darüber hinaus bewirkt die schwierige Prognostizierbarkeit handwerksrelevanter Technologieentwicklungen eine engere Zusammenarbeit mit Fachhochschulen und Universitäten sowie Fachinstituten. Dies erfordert entsprechende Personalkapazitäten und Finanzmittel. Weil diese in den meisten ÜBS nicht in dem notwendigen Maße zur Verfügung stehen, befinden sich die angestrebten Kooperationsvorhaben in vielen Fällen erst im Planungsstadium.

#### *Technologietransfer*

Die Kooperation mit externen Einrichtungen gewinnt insbesondere dann an Bedeutung, wenn sich die ÜBS selber in einer Vorreiterrolle auf dem Gebiet der neuen Technologien sehen. Immerhin die Hälfte der befragten ÜBS versteht sich als „Technologie-Transfer-Zentrum“ (TTZ) und übernimmt mit umfangreichen Beratungsaufgaben eine Pilotfunktion bei der Einführung neuer Technologien im Handwerk.

Andere ÜBS relativieren diese TTZ-Konzepte mit dem Hinweis, daß sie nur von einzelnen, besonders finanzstarken ÜBS qualifiziert verwirklicht werden können. Ferner sei die

technologische Entwicklung in der Mehrzahl der Handwerksbetriebe noch nicht weit genug fortgeschritten, so daß für die kostspielige Übernahme einer TTZ-Konzeption keine ausreichend hohe Nachfrage bestehe. Der Begriff des Technologie-Transfer-Zentrums wirke auf viele Handwerksbetriebe eher hemmend.

Unabhängig vom jeweiligen Selbstverständnis der einzelnen ÜBS tragen die Berufsbildungsstätten aber schon allein durch ihr NT-Lehrgangsangebot und durch die hieraus entstehenden informellen — in ihrer praktischen Wirkung nicht zu unterschätzenden — Beratungsaktivitäten zwischen ÜBS-Ausbildern und Betrieben zum Technologietransfer im Handwerk wirksam bei.

Mit der verstärkten Aufnahme von NT-Inhalten in ihr Lehrgangsprogramm leisten die ÜBS einen erheblichen Beitrag, um die auch im Handwerk gestiegenen Anforderungen an eine qualifizierte Aus- und Weiterbildung zu erfüllen. Die Untersuchungsergebnisse zeigen, daß die Übernahme der damit verbundenen Aufgaben nicht nur eine kostenintensive Ausstattungsbeschaffung, die z. B.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aus Mitteln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gefördert wird<sup>1)</sup>, voraussetzt. Zusätzlich ist die Einführung neuer Technologien auch mit weitreichenden Veränderungen bei den ÜBS-internen Arbeitsbereichen und deren Organisation sowie auch mit gestiegenen Anforderungen an das Management der ÜBS verbunden.

#### **4.5.2 Entwicklung überbetrieblicher Au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Ergänzende überbetriebliche Ausbildung für Auszubildende, die in einem Ausbildungsverhältnis in einem Betrieb stehen und in ein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 in meist ein- oder mehrwöchigen Lehrgängen Qualifikationen vermittelt erhalten, die sie im Betrieb nicht erwerben können, hat es in der ehemaligen DDR vor der Einigung fast gar nicht gegeben. Diese Form der Unterweisung ist typisch für eine mittelständische, insbesondere durch eine Vielzahl kleiner und mittlerer Handwerksbetriebe, geprägte Wirtschaftsstruktur. Seit auch hier eine Orientierung an den Grundsätz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erfolgte, ist es bereits zu zahlreichen Neugründungen vo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gekommen. Die derzeit zu beobachtende Entwicklung deutet darauf hin, daß sich dieser Trend noch erheblich verstärken wird. Dementsprechend wir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r Bedarf an Kapazitäten für ergänzende überbetriebliche Ausbildung kontinuierlich zunehmen. Daher muß mit der Schaffung bzw. Umstrukturierung entsprechender Kapazitäten für ergänzende überbetriebliche Ausbildung unverzüglich begonnen werden.

Dabei ist von folgenden Rahmenbedingungen auszugehen: In den letzten 10 Jahren wuchs der Anteil der Betriebe stark an, die auf kooperativer Basis Auszubildende anderer Betriebe ausbilden und die dafür notwendigen Kapazitäten geschaffen haben. Der Anteil Auszubildender in Kooperation erreichte 1989 in den betrieblichen Berufsschulen im Durchschnitt 70 %. Besonders breit entwickelt war die kooperative Ausbildung in der Landwirtschaft und im Bauwesen. In der Landwirtschaft wurden die berufspraktischen Ausbildungskapazitäten zum Beispiel zu 60 % von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Seite 167

Auszubildenden anderer Betriebe genutzt. Ohnehin entwickelten sich kooperative Ausbildungsformen in den Agrarregionen stärker als beispielsweise in industriellen Ballungsgebieten. Ebenso verlief der Ausprägungsgrad kooperativer Ausbildung berufs-differenziert. Als wesentliche Bedingung hierfür stellte sich der Aufwand für die materiell-technische Basis heraus, der zur Erfüllung der in den Ausbildungsordnungen gesetzten Ziele erforderlich war. Überdurchschnittlich häufig war die kooperative Ausbildung bei den Industriemechanikern und den Industrie-elektronikern, den Konstruktionsmechanikern und den Zerspanungsmechanikern anzutreffen. Insgesamt wurden im September 1989 ca. 39 % aller Auszubildenden in einer kooperativen Form berufspraktisch ausgebildet.

Seit November 1989 entwickelte sich die Situation in diesem speziellen Bereich sehr kontrovers. Ausbildungsbetriebe, die mit der Ausbildung für andere Betriebe beauftragt waren, kündigten ihren Partnerbetrieben die Kooperationsverträge. Andere Ausbildungsbetriebe waren zwar bestrebt, die einmal vorhandenen Ausbildungskapazitäten, die weit über den eigenen Bedarf reichen, weiter auszulasten. Ihnen fehlten Auszubildende, weil viele Partnerbetriebe auf Grund unklarer Perspektiven, schlechter Auftragslage oder gar des Konkurses keine Auszubildenden mehr aufnahmen. Beides hatte eine Reduzierung von Ausbildungsplätzen zur Folge.

Für eine Übergangszeit, in der sich das Handwerk neu zu entwickeln beginnt und die Industrie grundlegenden strukturellen Veränderungen unterworfen ist, können auch außerbetriebliche Maßnahmen die negativen Konsequenzen dieser Entwicklung für die Jugendlichen und für die künftig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nsgesamt mit in Grenzen halten.

Nach einer Kammerbefragung des Zentralinstituts für Berufsbildung bestanden in den neuen Ländern zum 1. November 1990 36 ÜBS. Bei 17 dieser Einrichtungen sind Betriebe Träger, bei 13 sind es Handwerkskammern, bei 5 gemeinnützige Vereine und bei einer eine Industrie- und Handelskammer. In den ÜBS werden 6 644 Auszubildende in der Erstausbildung und 744 Jugendliche ohne einen Ausbildungsvertrag mit einem Betrieb ausgebildet sowie 5 819 Teilnehmer in d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Dafür stehen 609 hauptberufliche und 54 nebenberufliche Lehrkräfte der Praxis und 145 hauptberufliche und 291 nebenberufliche Lehrkräfte der Theorie zur Verfügung. Die Ausbildungsprofile sind so entwickelt, daß allein 42,6 % der ÜBS in der Metall- und Elektrotechnik, 21 % in Wirtschaft und Verwaltung und 12 % in der Bautechnik ausbilden.

Die anderen Ausbildungsprofile verteilen sich auf die restlichen Berufsfelder annähernd gleichmäßig.

Der Prozeß einer vorübergehend außerbetrieblich organisierten Nutzung vorhandener Kapazitä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uß durch kompetente Berater unterstützt und begleitet werden.

Auf mittlere Sicht werden ergänzende überbetriebliche Maßnahmen die vorhandenen Kapazitäten und eventuelle neue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weitgehend auslasten.

## 4.6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 4.6.1 Berufsbildungsforschung an den Hochschu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Zielsetzungen und Vorschläge einer Denkschrif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Die Entwicklung vo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hängt in entscheidendem Maße von der Leistungsfähigkeit der beruflichen Bildung ab. Folgerichtig beschloss Präsidium und Sena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die Einsetzung einer Senatskommission für Berufsbildungsforschung. Damit dokumentierte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für wie wichtig sie dieses Themengebiet hielt und hält. Die 1986 vorgenommene Berufung der Kommissionsmitglieder aus Berufspädagogik, Wirtschaftspädagogik, Soziologie, Psychologie, Betriebswirtschaftslehre und Ingenieurwissenschaft spiegelt die als notwendig angesehene Interdisziplinarität.

Diese Senatskommission hat eine Denkschrift zur „Berufsbildungsforschung an den Hochschu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arbeitet.<sup>1)</sup>

#### *Aufgabe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Berufsbildungsforschung untersucht — so die Definition der Kommission — die Bedingungen, Abläufe und Folgen des Erwerbs fachlicher Qualifikationen sowie personaler und sozialer Einstellungen und Orientierungen, die für den Vollzug beruflich organisierter Arbeitsprozesse bedeutsam erscheinen. Zwei Sichtweisen bestimmen von der Tendenz her die Argumentationsstruktur der Senatskommission:

1. Zum einen wird anhand einer Fülle von Beispielen, die sich insbesondere auf die technologischen und demografischen Veränderungen und Verschiebungen beziehen, zu verdeutlichen versucht, daß im Bereich der beruflichen Erstausbildung und Weiterbildung grundlegende Umgestaltungen notwendig sind, die durch entsprechende Forschung vorzubereiten, zu stützen und zu evaluieren sind. Nur so läßt sich verhindern, daß der Faktor Arbeit im Hinblick auf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beschränkend wirkt.

2. Zum anderen wird herausgestellt, daß es neben der Betrachtung der ökonomischen Aspekte entscheidend auch auf die Entwicklung der Persönlichkeit der Erwerbstätigen und auf die Schaffung psychisch und sozial angemessener Ausbildungs- und Arbeitsbedingungen ankommt. So wird auf Entwicklungsprozesse beim Menschen abgehoben, die nicht nur auf seine Qualifizierung, der Herausbildung seiner beruflichen Tätigkeit, sondern auch auf seine Bildung, auf seine (berufliche) Mündigkeit zielen. Es geht also um die Förderung von Individuen, die ihre Handlungsspielräume erkennen und nutzen und damit zugleich besser zur Erreichung ökonomischer Zielsetzungen beizutragen vermögen.

<sup>1)</sup>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Berufsbildungsforschung an den Hochschu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CH) Weinheim, Basel, Cambridge, New York 1990.

Flankierend zu den Handreichungen wird im Modellvorhaben ein Fortbildungskonzept für Ausbilder entwickelt, in dem offene Ausbildergespräche mit Wochenendseminaren kombiniert werden. In diese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soll zum einen bei den Betrieben die Akzeptanz für den Medieneinsatz geschaffen werden. Zum anderen sollen lernpsychologische und didaktische Grundlagen zur Ausbildung lernbeeinträchtigter Jugendlicher vermittelt werden.

#### 5.4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Die Situation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der fünf neuen Bundesländer und Berlin (Ost) war 1990 insbesondere durch Schließung, Konkurs oder Entflechtung von Betrieben gekennzeichnet. Dadurch wurden Auszubildende aus ihren Ausbildungsverhältnissen entlassen oder konnten ihre Ausbildung nicht beginnen. Eine Bereitstellung anderer betrieblicher Ausbildungsplätze war nur in begrenztem Umfang möglich.

Um diesen Jugendlichen trotzdem die Chance zu geben, eine Ausbildung zu beginnen oder fortzusetzen, wurde der § 40 c Abs. 4 AFG (der DDR) — mit Maßgaben versehen — durch den Einigungsvertrag aufrechterhalten. Danach werden auch Ausbildungsmaßnahmen gefördert, wenn dadurch die Ausbildung von Arbeitslosen oder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n Berufsanwärtern ermöglicht wird, auch wenn sie nicht lernbeeinträchtigt oder sozial benachteiligt sind. Mit Inkrafttreten des Einigungsvertrages ist der Beginn der Maßnahme nicht nur auf das erste Jahr der Berufsausbildung beschränkt (vgl. Kapitel 5.3.1).

Die bisher geringe Zahl an bewilligten Plätzen (vgl. Übersicht 75) für die originären Gruppen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begründet sich im Fehlen der Fördervoraussetzungen nach § 40 c Abs. 2 Satz 1 AFG (die für das gesamte Bundesgebiet gelten), wonach die Teilnahme a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für die Fortsetzung der Ausbildung in einer überbetrieblichen Einrichtung zwingend erforderlich ist. Für Jugendliche, die einer solchen besonders intensiven Förderung nicht bedürfen, gibt es die

Möglichkeit der ausbildungsbegleitenden Hilfen als Ergänzung zu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Hier ist die vorherige Teilnahme a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nicht erforderlich.

Hervorzuheben sind die Bildungs- und Technologie-Zentren Halle-Osendorf in Sachsen-Anhalt und Rudolstadt in Thüringen als überbetriebliche Einrichtungen, für die Mittel der Berufsbildungsförderung eingesetzt wurden.

Durch den Einsatz von Förderungsmitteln des Bundes, das Zusammenwirken der zuständigen Stellen und durch die beginnende Arbeitsfähigkeit vo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und Handwerkskammern konnte die Zahl der nicht vermittelten Bewerber von 12 500 im August 1990 auf rund 3 200 im September 1990 reduziert werden (vgl. Kapitel 1.2). Wesentlich beigetragen hat hierzu die Aufnahme nicht vermittelter Bewerber in einjährige schulische Bildungsgänge (Berufsgrundbildungs- oder Berufsvorbereitungsjahr).

Unter den nicht vermittelten Bewerbern dominieren die Schulabgänger aus der 8. Klasse. Ihre Vermittlungschancen in betriebliche Ausbildungsstellen sind schlecht. Noch geringer sind die Chancen der Bewerber ohne Abschluß der 8. Klasse oder aus Hilfsschulen. Unter diesen Bewerbern ist der Anteil der Mädchen deutlich geringer als bei den Jungen. Er beträgt aus den Hilfsschulen 36 %, aus 8. Klassen jährlich 28 % bis 29 % und aus niederen Klassen 22 % bis 24 %. Für diese Gruppe von männlichen und weiblichen Jugendlichen mußten vor allem 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 geschaffen werden.

Diese genannten geschlechtsspezifischen Anteile sind lernpsychologisch begründet und über Jahre etwa gleich groß geblieben. Insofern richten sich die berufsvorbereitenden Maßnahmen insbesondere auf männliche Jugendliche.

Die 10. Klassen von Sonderschulen absolvierten bisher jährlich etwa 15 blinde, 70 bis 80 sehschwache, fast 100 gehörlose, 150 schwerhörige und 250 körperbehinderte Jugendliche. Das Schwerbehindertengesetz und das AFG ermöglichen umfassend die Ausbildung und Eingliederung behinderter Jugendlicher.

Die berufliche Erstausbildung Behinderter erfolgte in 16 Rehabilitationszentren für Berufsbildung mit einer Kapazität von 2 500 Plätzen. Diese Zentren werden nach Möglich-

**Übersicht 75: Benachteiligtenförd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bewilligte Plätze nach Ländern und Maßnahmentearten differenziert, Stand Ende Dezember 1990**

Land	Bewilligte Plätze nach Maßnahmentearten		
	Ausbildungs- begleitende Hilfen	Berufs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nach § 40 c Abs. 2 AFG (originäre Zielgruppe)	Berufs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nach § 40 c Abs. 4 AFG (erweiterte Zielgruppe)
Mecklenburg-Vorpommern	—	17	293
Brandenburg	—	227	465
Sachsen-Anhalt	—	—	629
Sachsen	37	15	615
Thüringen	—	126	1 695
Berlin (Ost)	—	13	341
<b>Insgesamt</b>	<b>37</b>	<b>398</b>	<b>4 038</b>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keit ausgebaut, modernisiert und zu Berufsbildungswerken entwickelt. Einige neue Berufsbildungswerke werden eingerichtet. Die Schule für Blinde und Sehschwache kann bis zu 150 Auszubildende jährlich aufnehmen. Berufsbildungswerke in den bisherigen Bundesländern haben freie Ausbildungsplätze angeboten.

Bis zum 27. September 1990 hatten sich 14 330 Behinderte um eine Berufsausbildungsstelle beworben. Den Arbeitsämtern wurden (für Behinderte) 11 992 Berufsausbildungsstellen, 952 Lehrvertragslösungen und 243 noch nicht vermittelte behinderte Bewerber gemeldet.

Ausbildung und Integration von Schwerbehinderten bedürfen weiterhin besonderer Förderung.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ird z. B. für Körperbehinderte eine Ausbildung in de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angestrebt.

## 5.5 Strukturdaten über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ohne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Trotz der Entspannungstendenzen auf dem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st ein nennenswerter Anteil von jungen Menschen in der jüngeren Vergangenheit ohne Berufsausbildung geblieben.

Fragen nach dem Umfang und den Ursachen dieser Entwicklung und den bildungspolitischen Konsequenzen, die zu ihrer Änderung notwendig sind, waren für den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nlaß, 1990 eine Repräsentativbefragung von rund 7 000 jungen Erwachsenen im Alter von 20 bis unter 25 Jahren und eine Intensivbefragung von rund 1 800 Jugendlichen, die ohne Berufsausbildung geblieben sind und sich derzeit auch nicht in Ausbildung befinden, in Auftrag zu geben. Als Vergleichsgruppe wurden zudem rund 1 500 Personen mit bzw. in Berufsausbildung im gleichen Alter „intensiv“ befragt.

### *Anteil und Zusammensetzung der Gruppe der „Nichtqualifizierten“*

Rund 14 % der Befragten gehört der Gruppe (ohne Schüler, Studenten und Jugendliche in Berufsausbildung) ohne Berufsausbildung an.<sup>1)</sup> Bei Männern und Frauen ist die Quote der „Nichtqualifizierten“ nahezu gleich.

Unter den ausländischen Befragten (Griechen, Italiener, Jugoslawen, Portugiesen, Spanier, Türken) sind 33 % ohne Berufsabschluß geblieben, bei den Deutschen sind es 12 %. Noch größere Unterschiede treten auf, wenn man die Anteile an nicht formal Qualifizierten nach ihren schulischen Bildungsabschlüssen vergleicht. 75 % der Jugendlichen ohne Hauptschulabschluß gelingt es nicht, eine berufliche Ausbildung abzuschließen. Bei den Befragten mit Hauptschulabschluß beträgt der Anteil ohne berufliche Qualifikation 16 %. Von den Realschulabsolventen (oder vergleichbare Abschlüsse) bleiben 6 % ohne Berufsausbildung.

Die Mehrzahl der jungen Erwachsenen ohne Berufsausbildung (56 %) gab an, in oder nach der Schulzeit keine berufliche Ausbildung nachgefragt zu haben. Sie mündeten

<sup>1)</sup> Berechnungen anhand des Mikrozensus ergeben vergleichbare Anteile an Nichtqualifizierten, frühere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und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erbrachten geringere Anteilswerte.

vielmehr überwiegend unmittelbar nach Schulende in ungelernte Erwerbsverhältnisse ein oder waren arbeitslos (bzw. machten keine Angaben zur Erwerbstätigkeit).

Während bei Deutschen mehr Frauen (59 %) als Männer (49 %) gar nicht erst um eine Ausbildung nachsuchten, sind es bei Ausländern mehr Männer (66 %) als Frauen (60 %).

Von den 20- bis unter 25jährigen ohne Berufsausbildung fragten 42 % eine Ausbildung nach (weitere 2 % machten keine Angaben). Annähernd die Hälfte (19 %) hatte mit ihren Bewerbungen keinen Erfolg. 23 % — also rund ein Viertel — der jungen Erwachsenen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haben eine Ausbildung (betrieblich oder vollzeitschulisch) begonnen, diese dann aber vorzeitig beendet, bzw. die Abschlußprüfung nicht bestanden.

### *Nichtnachfrage und Nichtaufnahme einer Berufsausbildung*

Für Verzichter auf eine Berufsausbildung standen mit Antworten wie „schlechte Zeugnisse“, „Tests“ (35 %) und „keinen Ausbildungsplatz bekommen“ (22 %) solche Gründe oben an, die mit einer schlechteren individuellen Konkurrenzfähigkeit auf dem Ausbildungsmarkt zusammenhängen. Mit Gründen wie „keine Lust mehr zum Lernen“ und „wute nicht, was ich werden sollte“ wurden aber Motivations- bzw. Orientierungsprobleme fast ebenso häufig genannt. Auch finanzielle Gründe und Veränderungen im familiären Bereich („wollte heiraten“, „Schwangerschaft“) spielen eine Rolle.

Anders als bei Nichtnachfragern kann man bei erfolglosen Nachfragern nicht von einer mangelnden Motivation sprechen. Diese Gruppe scheint im Gegenteil für eine Berufsausbildung hoch motiviert zu sein. Das schlägt sich u.a. darin nieder, daß von ihnen wesentlich mehr Instanzen (z. B. die Berufsberatung des Arbeitsamtes) im Rahmen der Ausbildungsplatzsuche um Hilfestellung bemüht wurden als beispielsweise von erfolgreichen Nachfragern. Auch die Anzahl der Betriebe, bei denen um Ausbildungsplätze nachgefragt wurde, liegt bei dieser Gruppe deutlich höher (11 Betriebe) als bei der Gruppe mit Berufsabschluß (8 Betriebe). Das Scheitern scheint mehr auf die schlechteren individuellen Konkurrenzbedingungen dieser Gruppe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zurückzuführen zu sein (Schulabschlüsse, Ausbildungsplatzangebot) und auf das Auswahlverhalten der Betriebe.

### *Vorzeitige Beendigung der Ausbildung*

Nur wenige Jugendliche, die ihre Ausbildung vorzeitig beendet haben, führten ihre Ausbildung bis zur Prüfung durch (9 %) und schafften dann die Prüfung nicht. Der größere Anteil beendete seine Ausbildung bereits im ersten Ausbildungsjahr (49 %) bzw. später vor der Prüfung (34 %); 9 % machten keine Angaben zum Zeitpunkt.

Als Gründe der vorzeitigen Beendigung der Ausbildung — i. d. R. treffen mehrere Gründe zusammen — werden jeweils von ca. 50 % der Betroffenen „Anforderung der Ausbildung“ bzw. „Probleme mit Kollegen, Ausbildern und Lehrern“ genannt. Eine weitere Begründung, die im nennenswerten Umfang angegeben wurde, lautete: „die Ausbildung machte keinen Spaß“ oder der „Betrieb war nicht der Wunschbetrieb“ (10 %). Ca. jeder fünfte (23 %) gab familiäre Probleme als Grund an, ein hoher Anteil „gesundheitliche Probleme“ (17 %) oder finanzielle Gründe („mußte

**Übersicht 90: Teilnehmer an AFG-geförderten Maßnahmen zu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mit bestandener Abschlußprüfung nach Prüfungsart im alten Bundesgebiet 1980 bis 1989**

Jahr	Teilnehmer			
	Insgesamt	Davon		
		Meisterprüfungen	Prüfungen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Sonstige Prüfungen
1980	98 509	15 798	10 139	72 572
1981	124 670	20 450	18 392	85 828
1982	147 546	23 680	22 925	100 941
1983	163 456	21 184	25 438	116 834
1984	153 846	18 927	21 686	113 233
1985	170 780	21 605	22 886	126 289
1986	185 165	23 033	20 733	141 399
1987	229 374	38 037	28 565	162 772
1988	255 314	38 965	35 343	181 006
1989	248 897	45 366	36 552	166 979

Quelle: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NBA), Arbeitsstatistik-Jahreszahlen, Jahrgänge 1981 bis 1989

vor der Maßnahme zu 48 % als „Nichtfacharbeiter“, zu 24 % als Facharbeiter und zu 22 % als Angestellte oder Beamte tätig.

Über die Hälfte (59 %, 1988: 56 %) der Männer und mehr als zwei Drittel (68 %, 1988: 66 %) der Frauen haben sich 1989 mit Vollzeitmaßnahmen auf die Prüfungen vorbereitet. Eine quantitativ nur geringfügige Rolle (unter 1 %) spielte bei den AFG-geförderten beruflichen Weiterbildungsmaßnahmen die Prüfungsvorbereitung durch Fernunterricht.

**6.3.2 Fortbildungsprüfung zum Industriemeister**

Der Industriemeister nimmt nach wie vor eine Schlüssel-funktion im Produktions- und Fertigungsbereich ein. Daher ist die berufliche Fortbildung zum Industriemeister nicht nur für die Betriebe von erheblichem Gewicht, sondern auch eine interessante und zukunftssichere Qualifizierungs- und Aufstiegsmöglichkeit für Facharbeiter.

Im Hinblick auf die Bedeutung der beruflichen Fortbildung zum Industriemeister ha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it Unterstütz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und in Abstimmung mit den Sozialpartnern seit 1978 die Industriemeisterprüfung für insgesamt 16 wichtige Fachrichtungen durch Rechtsverordnung geregelt. Damit erhalten über 90 % der Teilnehmer an Industriemeisterprüfungen der zuständigen Industrie- und Handelskamern die Möglichkeit, den staatlich anerkannten Abschluß „Geprüfte Industriemeister“ zu erwerben.

Nachdem die staatliche Regelung der Industriemeisterprüfungen in wesentlichen Bereichen abgeschlossen werden konnte, erhebt sich im Hinblick auf zwischenzeitlich eingetretene technische und wirtschaftliche Entwicklungen die Frage, inwieweit die bisherigen Maßnahmen zur Vorbereitung auf die Prüfungen und die Prüfung selbst in allen Bezügen den veränderten Anforderungen gerecht werden. Insbesondere wird auch zu klären sein, welche Rolle der Handlungskompetenz der künftigen Meister bei der Durch-

führung der Qualifizierungsmaßnahmen zukommt und welche Konsequenzen aus den gewonnenen Erkenntnissen zum Beispiel für die Neuordnung der Industriemeisterprüfung zu ziehen sind.

**6.4 Entwicklung der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geförderten beruflichen Weiterbildung (Fortbildung, Umschulung und betriebliche Einarbeitung)**

Berufliche Weiterbildung sichert nicht nur die Beschäftigung von Erwerbstätigen und verbessert die Eingliederungschancen von Arbeitslosen — angesichts starken technischen Fortschritts und ausgeprägten Strukturwandels der Wirtschaft wird sie für die Deckung des Fachkräftebedarfs immer wichtiger. Berufliche Weiterbildung ist — wie die Erstausbildung — in erster Linie Sache der Betriebe und Verwaltungen. Sie leisten dafür beachtliche Aufwendungen.

Der Staat fördert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intensiv, aber subsidiär. Hilfen für Personen, die nicht auf betriebliche Unterstützung rechnen können, stehen dabei im Vordergrund. Diese Förderung beruflicher Weiterbildung ist Kernstück aktiver Arbeitsmarktpoli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abei werd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vor allem Lehrgangskosten ganz oder teilweise übernommen sowie ein Unterhaltsgeld während des Besuchs von Bildungsmaßnahmen gewährt (§§ 33 ff., 41 ff. AFG).

Die Zahl der Eintritte in eine von der Bundesanstalt geförderte berufliche Weiterbildung hatte 1987 mit 596 400 ihren bisherigen Höhepunkt (1982: erst 265 000). Nach einer Phase der Konsolidierung auf hohem Niveau (1989: 489 900) erreichten 1990 die Eintritt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mit 575 400 fast wieder das Niveau von 1987. Hinzu kommen 114 000 statistisch erfaßte Eintritte in den fünf neuen Ländern und Berlin (Ost), nicht gerechnet einige zehntausend Anträge auf Förderung beruflicher Weiterbildung, die Ende Dezember 1990 noch unerledigt waren.

Die finanziellen Aufwendungen der Bundesanstalt für die individuelle Förderung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mschulung und Einarbeitung (ohne die für Rehabilitanden) betragen 1990 für das bisherige Bundesgebiet 6,5 Mrd. DM (1989: 5,38 Mrd. DM; 1988: 5,91 Mrd. DM).

Für 1991 sieht der Haushaltsansatz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Ausgaben in Höhe von 6,7 Mrd. DM, für die neuen Länder 6,64 Mrd. DM zur Förderung beruflicher Weiterbildung vor.

Nachdem eine gute und zeitgemäße Qualifikation zwar keine hinreichende, aber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en im Osten Deutschlands anstehenden Strukturwandel ist, plant die Bundesanstalt für 1991 allein dort die Förderung von rund 350 000 Teilnehmern in Fortbildungen, Umschulungen und betriebliche Einarbeitung im Jahresdurchschnitt.

**6.4.1 Altes Bundesgebiet**

*Eintritte*

Unter den 574 000 Personen, die 1990 eine geförderte berufliche Weiterbildung begonnen haben, befanden sich 231 400 Frauen; deren Anteil an allen Eintritten hat sich damit weiter deutlich, und zwar auf 40 % erhöht (1989: 37 %; 1983: 32 %).



25 600 der neuen Weiterbildungsteilnehmer waren Ausländer. Damit hat sich deren Anteil an allen Eintritten auf 4 % verringert (Vorjahr: 5 %).

Ein wesentlich größeres Gewicht als früher hatten 1990 Aussiedler und Zugezogene aus der ehemaligen DDR bzw. den neuen Ländern. So begannen 91 400 Aussiedler eine berufliche Weiterbildung (ohne Deutsch-Sprachlehrgänge), 56 100 mehr als 1989, sowie 62 300 Personen, die aus der ehemaligen DDR oder den neuen Bundesländern zugezogen waren.

Vor allem deshalb hat sich auch der Anteil der zuvor Arbeitslosen an allen in berufliche Weiterbildungsmaßnahmen Eingetretenen wieder deutlich auf 66 % erhöht (1989: 57 %; 1986: 66 %). U. a. weil Aussiedler und aus der ehemaligen DDR Zugezogene vorher meist nur kurze Zeit arbeitslos gewesen sind, hat sich der Anteil der Langzeitarbeitslosen an allen Eingetretenen leicht auf 11,3 % ermäßigt (1989: 11,6 %).

Der Anteil der neuen Teilnehmer an beruflicher Weiterbildung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hat sich 1990 weiter spürbar auf 27 % erhöht (1989: 25 %).

Der Schwerpunkt der begonnenen beruflichen Weiterbildungen lag auch 1990 mit 442 800 bei den Fortbildungen (77 % aller Eintritte; 1989: 79 %). Die Umschulungen nehmen mit 63 400 Eintritten jetzt den dritten Rang ein (11 %; 1989: 12 %), nachdem die Förderung betrieblicher Einarbeitungen — zumal für Zugezogene aus der ehemaligen DDR bzw. den neuen Ländern — sich auf 67 900 Fälle erhöht hat (12 %; 1989: 8 %). U. a. deshalb haben auch Eintritte in Maßnahmen mit betrieblicher Beteiligung stark auf 174 000 zugenommen (30 %; 1989: 24 %).

1990 waren von den 506 200 Eintritten in Maßnahmen beruflich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also ohne betriebliche Einarbeitung) 354 000 notwendig i. S. von § 44 Abs. 2 Satz 2 oder Abs. 2 b AFG, d. h. die Teilnahme war notwendig, um Arbeitslosigkeit durch Arbeitsaufnahme zu beenden, unmittelbare Bedrohung von Arbeitslosigkeit abzuwenden oder Personen ohne beruflichen Abschluß zu einer Qualifizierung zu verhelfen. Der Anteil dieser „notwendigen“ Förderungsfälle an allen Eintritten in Fortbildung und Umschulung hat sich demnach stark von 61 % im Jahre 1989 auf 70 % erhöht (Anteil sogenannter zweckmäßiger Förderung 1990 entsprechend: 30 %).

225 000 Eintritte in Fortbildung und Umschulung erfolgten in Maßnahmen, die im Auftrag der Arbeitsämter zumeist für zuvor Arbeitslose durchgeführt werden. Der Anteil von Eintritten in diese „Auftragsmaßnahmen“ an allen begonnenen Fortbildungen und Umschulungen hat sich damit ebenfalls stark von 37 % im Jahre 1989 auf 44 % erhöht (Anteil von Eintritten in sogenannte freie Maßnahmen 1990 entsprechend: 56 %).

#### *Teilnehmer (Bestandszahlen)*

Der jahresdurchschnittliche Bestand an Teilnehmern in Maßnahmen beruflicher Weiterbildung verzeichnete 1990 mit 349 700 einen vorher nie erreichten Stand (1989: 327 000; 1988: 334 600). 164 300 oder 47 % von ihnen waren vorher arbeitslos gewesen (1989: 43 %; 1988: 46 %). Mit — wie im Vorjahr — 71 % aller Teilnehmer lag der Schwerpunkt bei den Fortbildungen. Wegen der vergleichsweise langen Dauer erreichen die Umschulungen anders als bei den Eintritten 24 % (25 %), die betrieblichen Einarbeitungen 5 % (4 %).

1990 erhielten 341 200 der in Fortbildung oder Umschulung Eingetretenen ein Unterhalts- und 16 600 ein Eingliederungsgeld zur Bestreitung des Lebensunterhalts. Die Leistungsempfängerquote stieg damit auf 71,5 (1989: 279 100 Empfänger von Unterhaltsgeld, Quote 62 %).

Weitaus am häufigsten (84 % aller neuen Teilnehmer an Fortbildung oder Umschulung mit Uhg/EGG-Anspruch) wurde das Unterhaltsgeld als Zuschuß gewährt, d. h. es braucht normalerweise nicht zurückgezahlt zu werden (1989: 85 %). Dabei steht das „große“ Uhg, d. h. in Höhe von 65 % oder 73 % des Bemessungsentgelts (§ 44 Abs. 2 AFG) mit einem Anteil von 78 % im Vordergrund (1989: 79 %). 5 % aller neu Eingetretenen mit Uhg/EGG-Anspruch erhielten ein (geringeres) Unterhaltsgeld in Höhe des vorher bezogenen Arbeitslosengeldes oder der Arbeitslosenhilfe (§ 46 Abs. 2 AFG) (1989: 6 %). Von äußerst geringer Bedeutung (0,3 %; 1989: 0,5 %) ist nach wie vor das Teil-Unterhaltsgeld für jugendliche Teilzeitbeschäftigte und Berufsrückkehrerinnen (§ 44 Abs. 2 b AFG). 41 700 oder 12 % aller neuen Teilnehmer in Fortbildung oder Umschulung erhielten ein „kleines“ Uhg als Darlehen, d. h. in Höhe von 58 % des Bemessungsentgelts (§ 44 Abs. 2 a AFG) (1989: 15 %). Mit diesem Typ von Unterhaltsgeld wird vornehmlich die (nur zweckmäßige) Aufstiegsfortbildung von vorher Beschäftigten gefördert. 16 600 oder 5 % der Eingetretenen erhielten das 1990 erstmals gewährte Eingliederungsgeld für Aussiedler bzw. Übersiedler.

#### **6.4.2 Neue Bundesländer**

Seit 1. Juni bis Ende Dezember 1990 wurden 114 000 Eintritte von Personen aus der ehemaligen DDR bzw. den neuen Ländern in eine von der Arbeitsverwaltung geförderte Maßnahme beruflicher Weiterbildung statistisch erfaßt. Außerdem waren Ende Dezember 1990 noch mehrere zehntausend entsprechende Anträge gestellt, aber noch nicht entschieden. Bei diesen Zahlen ist in Rechnung zu stellen, daß sich die Infrastruktur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grobenteils noch im Aufbau befindet, viele Arbeitnehmer von der Notwendigkeit der Qualifizierung noch überzeugt werden müssen.

Allein von Anfang September bis Ende Dezember 1990 gab es 98 600 Eintritte in berufliche Fortbildung, Umschulung oder betriebliche Einarbeitung. Bei 55 % dieser neuen Teilnehmer handelt es sich um Frauen; ihr Anteil liegt also deutlich höher 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40 %). 47 % der neuen Teilnehmer waren vorher arbeitslos und 36 % traten als Empfänger von Kurzarbeitergeld — eine Besonderheit des AFG für die neuen Länder — in eine berufliche Weiterbildung ein. In 82 % der Fälle war der Lernort eine Schule, bei 12 % ein Betrieb und beim Rest (6 %) Schule und Betrieb.

In Fortbildungen sind 75 % der neuen Teilnehmer eingetreten, 20 % in Umschulungen und in betriebliche Einarbeitungen 5 %. Bei den Fortbildungen dominieren Eintritte in Maßnahmen zur Feststellung, Erhaltung, Erweiterung oder Anpassung beruflicher Kenntnisse mit 77 % der Eintritte in Fortbildungen und solche zur Verbesserung der Vermittlungsaussichten (§ 41 a AFG) mit 12 %. 53 % der neu begonnenen Fortbildungen oder Umschulungen waren Eintritte in freie Maßnahmen; 42 % in Auftragsmaßnahmen.

## 6.5 System der Weiterbildung und neue Anforder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6.5.1 Strukturdaten (Teilnehmer, Träger)

Von 1986 bis 1989 ist die Zahl der Teilnehmer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ständig gestiegen. Etwa jeder 4. Beschäftigte war im Jahre 1989 in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einbezogen, vorrangig im Rahmen betrieblicher Weiterbildung.

Im Vordergrund stand die Weiterbildung im erlernten Beruf, zunehmend im Zusammenhang mit der Einführung sogenannter Schlüsseltechnologien. In der beruflich-fachlichen Aus- und Weiterbildung wurden in Volkshochschulen 1989 etwa 50 000 Teilnehmer qualifiziert.

Mit den tiefgreifenden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Veränderungen im Jahre 1990 ergaben sich völlig neuartige Aufgabenstellungen an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von Facharbeitern und Meistern. Auch von der hohen Zahl von Kurzarbeitern und Arbeitslosen geht ein enormer Bedarf an Umschulung und Fortbildung zur Anpassung vorhandener Qualifikationen an neue Arbeitsinhalte und -bedingungen aus.

Dennoch sind 1990 eher rückläufige Tendenzen in den Teilnehmerzahlen erkennbar gewesen. Unternehmen haben wegen ihrer wirtschaftlichen Lage die eigene betriebliche Weiterbildung nur unzureichend gefördert. Auch der finanziellen Beteiligung durch die Arbeitnehmer an den Kosten der Weiterbildung sind Grenzen gesetzt. Zur Befriedigung des Weiterbildungsbedarfs spielen die AFG-geförderte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eine wichtige Rolle. Geplant sind v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für 1991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für rund 350 000 Teilnehmer im Jahresdurchschnitt.

Andererseits befindet sich die Trägerstruktur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m Umbruch. Die beruflichen Weiterbildungskapazitäten befinden sich zumeist in Betrieben und Kombinat. Etwa jeder 20. Betrieb verfügte über eine eigene Weiterbildungseinrichtung, die auch überbetrieblich genutzt wurde.

Ausgehend von dem hohen Weiterbildungsbedarf sollten die vorhandenen Kapazitäten entsprechend den betrieblichen Gegebenheiten umstrukturiert und Möglichkeiten der Überführung in andere Trägerschaft geschaffen werden.

In bescheidenem, aber wachsendem Umfang sind neue Trägerschaften, so durch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Handwerkskammern, Bildungswerke der Wirtschaft, der Gewerkschaften, der Kirchen, in Form überbetrieblicher oder freier Träger entstanden, häufig in enger Zusammenarbeit mit entsprechenden Partnern und Teilhaber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1990 hat der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mit einem Volumen von knapp 200 Mio. DM den Aufbau eines Netzes von Modell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für Arbeitslose und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fördert. Förderungsvoraussetzung war die Kooperation bewährter Weiterbildungsträg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mit Träger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ielsetzung ist die Übertragung bewährter Weiterbildungserfahrungen in die neuen Länder. 1991 wird dieses Förderprogramm neu aufgelegt, um möglichst bald zu einem flächendeckenden Netz von berufsfachlich breit gestreuten Angebot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zu kommen.

### 6.5.2 Ordn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Bisher war die Ordnungsstruktur beruflicher Erwachsenen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gekennzeichnet durch Ministerratsbeschlüsse, Verfügungen des Staatssekretariats für Berufsbildung, Ordnungen einzelner Wirtschaftsbereiche und betriebliche Regelungen. Im „Arbeitsgesetzbuch der DDR“ vom 16. Juni 1977 wurde grundsätzlich die Verantwortung der Betriebe für die berufliche Aus- und Weiterbildung der Erwerbstätigen sowie die damit verbundenen Rechte und Pflichten festgelegt.

Die Betriebe hatten die Verantwortung für die rechtzeitige und kontinuierliche Aus- und Weiterbildung der Beschäftigten und für die Schaffung der erforderlichen Voraussetzungen. Die berufliche Erwachsenenbildung erfolgte im wesentlichen in betrieblichen und einigen kommunalen Einrichtungen.

Grundlage für die Ordnung und Durchfüh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der Einigungsvertrag. Danach gelten die Vorschriften des BBiG und der HwO über die berufliche Fortbildung und Umschulung nach bestimmten Maßgaben des Einigungsvertrages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chon vorher war durch das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GBBiG) vom 19. Juli 1990 die Zuständigkeit beruflicher Erwachsenenbildung von den ehemaligen Wirtschaftsbereichen, Kombinat und Betrieben auf die zuständigen Stellen übertragen worden. Solange die im BBiG genannten zuständigen Stellen nicht bestehen, bestimmt für den Bereich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die zuständige oberste Landesbehörde die zuständige Stelle.

Eine vor Inkrafttreten des BBiG begonnene Facharbeiterausbildung für Erwachsene kann nach den bisher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werden. Erfüllen die Teilnehmer die Voraussetzungen nach § 40 Abs. 2 BBiG und wünschen sie den Abschluß in einem anerkannten Ausbildungsberuf, ist in Absprache mit den zuständigen Stellen die Zulassung zur Prüfung möglich.

Das Problem des Berufswechsels wurde in der ehemaligen DDR durch die „Anordnung über den Erwerb eines Facharbeiterabschlusses bei gesellschaftlichem notwendigen Berufswechsel“ vom 17. September 1984 geregelt. Danach hatte der jeweilige Betrieb für die betreffenden Facharbeiter den Erwerb eines neuen Facharbeiterabschlusses im Zusammenhang mit Rationalisierungsmaßnahmen, Strukturveränderungen und anderen Erfordernissen zu gewährleisten.

Das zum 1. Juli 1990 eingeführte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der DDR schuf die für die Förderung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erforderlichen gesetzlichen Regelungen, die mit dem Aufbau einer leistungsfähigen Arbeitsverwaltung als organisatorische Voraussetzung begleitet werden. Nach dem Einigungsvertrag, mit dem das Arbeitsförder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geführt wird, bleiben einige Regelungen des „AFG der DDR“ als befristete Sonderregelungen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Förderung vo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tehen.

Nach Art. 37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gelten in der ehemaligen DDR erworbene oder staatlich anerkannte schulische, berufliche und akademische Abschlüsse oder Befähigungsnachweise in dem dortigen Gebiet weiter. Prüfungen oder Befähigungsnachweise, die in den neuen oder den alten Bundesländern erworben wurden, stehen einander gleich, wenn sie gleichwertig sind. Die Gleichwertigkeit wird auf Antrag von der jeweils zuständigen Stelle im Einzelfall festgestellt.

Am 3. Oktober 1990 laufende Prüfungsverfahren in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werden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zu Ende geführt. Für neue Prüfungen gelten die Vorschriften des BBiG und der HwO. Die Lehrgänge zur Vorbereitung auf diese Prüfungen sind im allgemeinen weder durch Gesetz noch durch Verordnungen geregelt, sie können daher von den Weiterbildungsträgern grundsätzlich frei und in eigener Verantwortung ausgestaltet und durchgeführt werden. Nur Lehrgänge, deren Teilnehmer nach dem AFG gefördert werden, müssen bestimmte Mindestvoraussetzungen erfüllen.

### 6.5.3 Weiterbildungsbedarf infolge des Strukturwan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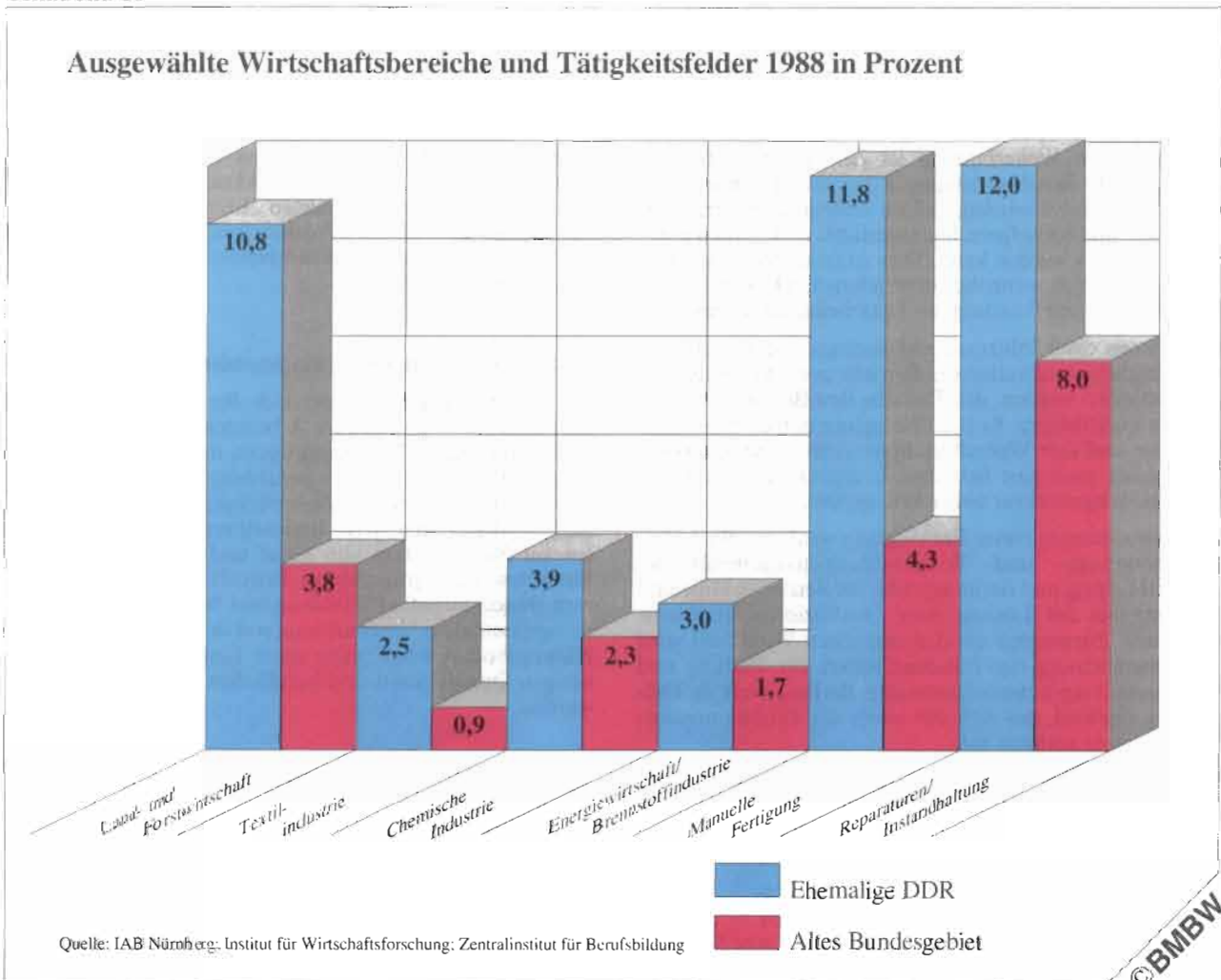
Die Veränderung der politischen und administrativen Strukturen und die Einführung des Rechts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en Beitritt der DDR erfordert bei den Bürgern der neuen Länder einen intensiven Lernprozeß. Elementare Kenntnisse und ein Minimum an Übung in der Wahrnehmung staatsbürgerlicher Rechte und Pflichten zur aktiven persönlichen Lebensgestaltung und zur vollwertigen Berufsausübung müssen rasch erworben werden.

Auch der wirtschaftliche Strukturwande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fordert neue und zusätzliche berufliche Kenntnisse und Fertigkeiten. Von den etwa 8 Millionen der in diesen Gebieten bisher Beschäftigten werden nach jüngsten Schätzungen mindestens ein Drittel von einem Betriebs-, Berufs- oder Arbeitsplatzwechsel betroffen; der Umfang notwendiger Umschulung und Fortbildung ist aus diesem Größenverhältnis abzuleiten.

Zu den Wirtschaftsbereichen, in denen sich Freisetzungen konzentrieren, gehören vor allem die Landwirtschaft, die Textilindustrie, Chemieindustrie, Grundstoffindustrie und Energiewirtschaft. Daneben führt der Abbau bestimmter Tätigkeitsfelder zur Freisetzung von Personal. Dazu gehören die manuelle Fertigung und Instandhaltungstätigkeiten in Reparaturwerkstätten. Gewisse Anhaltspunkte für zu erwartende Dimensionen des Arbeitskräfteabbaus liefern Strukturvergleiche der Beschäftigten in der ehemaligen DDR mit denen der ehemaligen Bundesrepublik (vgl. **Schaubild 10**).

Wachstums- und damit Aufnahmebereich ist insbesondere der gesamte Dienstleistungsbereich: der Einzelhandel, der Transport-, Umschlag- und Lagerbereich, der Finanzwirtschafts- und Versicherungsbereich, der Organisations- und

Schaubild 10



Verwaltungsbereich, die Tourismusbranche, die Sozialberufe und der Bereich des Post- und Kommunikationswesens.

Es zeichnet sich bereits ab, daß bestimmte Regio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onders große Probleme bei der Struktur- und Qualifikationsanpassung zu bewältigen haben werden. Dazu gehören die ländlichen Regionen, in denen sich landwirtschaftsfremde Gewerbezweige des Klein- und Mittelstandes etablieren müssen, um die Regionen lebensfähig zu halten, aber auch Industrieregionen, deren Schwerpunkindustrie und Zulieferindustrie stark rückläufig sind. Dazu müssen gezählt werden:

- die Textilregion im Erzgebirge
- die Lausitzer Braunkohlegewinnungs- und -verarbeitungsregion
- die mitteldeutsche Chemieregion
- die Kalibergbauregion im Grenzgebiet von Thüringen/Sachsen-Anhalt
- die stahlerzeugenden Regionen im Land Brandenburg
- die nordostdeutsche Schiffbauregion.

Der strukturbedingte Weiterbildungsbedarf wächst in sehr kurzer Zeit.

Was in den neuen Ländern vor allem fehlt, ist eine auf die Ausnahmesituation zugeschnittene Weiterbildungs-träger- und Weiterbildungsberatungsstruktur.

Angesichts dieser Gesamtlage müssen die Betriebe in den neuen Ländern die Hauptlast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saufgabe übernehmen. Hierfür stehen Kapazitäten zur Verfügung. Denn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war in der ehemaligen DDR dezentral organisiert. Die Hauptverantwortung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lag bei den Betrieben und Kombinat. Insgesamt bestanden rund 750 Betriebsakademien und 550 Betriebsschulen für Weiterbildungszwecke.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ist der Schlüssel für die wirtschaftliche Wiederbelebung in den neuen Ländern. Sie muß so organisiert werden, daß sie kostenmäßig erträglich, funktions- und bedarfsgerecht ausgestaltet und zeitlich kurzfristig realisiert werden kann. Dies ist trotz der staatlichen Hilfe nur möglich, wenn die Unternehmen sich verstärkt der Aufgabe der Qualifizierung der Mitarbeiter annehmen.

Im Rahmen einer Informationskampagne soll deshalb die Weiterbildungsmotivation der Betriebe gestärkt werden. Es soll verhindert werden, daß Betriebe ihre Bildungsaktivitäten aus kurzfristigen Kostenüberlegungen reduzieren und einstellen und ihr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schließen. Gleichzeitig muß eine betriebsnahe organisierte berufliche Weiterbildungsstruktur entwickelt werden.

Zur Unterstützung dieser Entwicklung wird eine Weiterbildungsberatungs- und Weiterbildungsmangementgesellschaft in Leipzig und Berlin erprobt, die Betrieben Hilfe und Beratung bei der Lösung ihrer Qualifizierungsprobleme geben soll. Zusammen mit der hessischen Wirtschaft wird mit Unterstützun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in unternehmennahes Bildungswerk in Thüringen aufgebaut, das sich vor allem der kaufmännischen Weiterbildung widmen soll.

Ferner werden in den neuen Ländern Modellseminare für das berufliche Weiterbildungsmangement und für Dozent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durchgeführt, um zukünftige Leiter und Multiplikatoren vo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unterschiedlicher Träger heranzubilden.

Angesichts der hohen Frauenerwerbstätigkeit in der ehemaligen DDR ist es erforderlich, durch geeignete Maßnahmen sicherzustellen, daß Frauen gleichermaßen an Weiter-

bildung, die ihnen neu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und eine eigene Existenzsicherung eröffnet, teilnehmen können. Zu berücksichtigen sind dabei die besonderen Umstellungs- und Belastungssituationen, von denen gerade Frauen mit Kindern betroffen sind.

Von Seiten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sind besondere Maßnahmen eingeleitet worden, um Frauen, die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bzw. bedroht sind, durch geeignete Weiterbildungsangebote bei der beruflichen Umstellung und Neuorientierung infolge des Strukturwandels gezielt zu unterstützen (vgl. Kapitel 6.6.4).

Eine besondere Zielgruppe für Weiterbildungsmaßnahmen infolge des Umstrukturierungsprozesses sind Frauen im „Babyjahr“ bzw. dem Erziehungsurlaub beim beruflichen Wiedereinstieg.

Angesichts der ungesicherten Existenz vieler Betriebe sind die gesetzlich vorgesehenen Rückkehrmöglichkeiten vieler Frauen faktisch nicht zu realisieren. Hier ist es erforderlich, frühzeitig Beratungs- und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zu schaffen, die mit der Erziehung und Betreuung eines Kleinkindes vereinbar sind, einen kontinuierlichen Kontakt zur Arbeitswelt ermöglichen und eine aktuelle berufliche Qualifikation vermitteln, die neue Berufsperspektiven eröffnet.

Hier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überwiegende Zahl der Frauen, die nach dem „Babyjahr“ bzw. dem Erziehungsurlaub eine Erwerbstätigkeit wieder aufnehmen möchten, über eine abgeschlossene berufliche Ausbildung und Berufserfahrung verfügt.

Die Möglichkeit zur Teilnahme an Weiterbildungsmaßnahmen während des Erziehungsurlaubs bzw. im Anschluß daran ist wesentlich von den vorhandenen Kinderbetreuungsangeboten abhängig.

Für die inhaltliche Ausrichtung der Weiterbildungsangebote und die zu berücksichtigenden Rahmenbedingungen haben die von der Konzertierte Aktion Weiterbildung im November 1990 verabschiedeten „Empfehlungen zur Weiterbildung von Frauen zur Vorbereitung und Unterstützung des Wiedereinstiegs in das Erwerbsleben“ auch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Gültigkeit.

#### 6.5.4 Weiterbildungsbedarf bei besonderen Personengruppen

Bei der gegenwärtigen und sich für die nahe Zukunft abzeichnenden schwierigen Arbeitsmarktlage werden für bestimmte soziale Personengruppen mit einem hohen Arbeitsmarktrisiko besondere berufsbildungspolitische Maßnahmen erforderlich sein. Zu berücksichtigen ist dabei auch die Lage der Frauen, deren Berufssituation und Möglichkeiten zur Vereinbarung von Beruf und Familie durch den Strukturwandel grundlegend betroffen sind. Durch eine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vergebene repräsentative Untersuchung soll der spezifische Weiterbildungsbedarf von Frauen unter Einbeziehung ihrer bisherigen Qualifikation und beruflichen Tätigkeiten geklärt werden.

##### *Arbeitslose Jugendliche (unter 25 Jahre)*

In der Mehrzahl verfügen die jugendlichen Arbeitslosen über eine abgeschlossene berufliche Ausbildung. Um der Gefahr der Entwertung ihrer erworbenen Qualifikation zu begegnen, sind Maßnahmen zur Reaktivierung und Vertiefung von beruflichem Wissen und Können sowie zur Anpassung an neue berufliche Anforderungen notwendig.

Für Jugendliche ohne Berufsausbildung, die in keinem Ausbildungsverhältnis stehen, sind Maßnahmen zur Sicherung von Ausbildungsmöglichkeiten ein vordringliches gesellschaftliches Erfordernis (vgl. **Kapitel 1.2**).

#### *Zur beruflichen Förderung und Umschulung von Behinderten*

Für die berufliche Fortbildung und Umschulung von Behinderten ist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ein Netz von Berufsförderungswerken geplant. Berufsförderungswerke sind gemeinnützige außerbetriebliche Bildungs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Rehabilitation, welche hauptsächlich d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behinderter Erwachsener, die in der Regel berufstätig waren, dienen. Sie führen Maßnahmen der beruflichen Um- und Neuorientierung mit einer auf die individuellen Belange der Behinderten ausgerichteten begleitenden Betreuung in erwachsenenspezifischer und behindertengerechter Form und Dauer durch. In den Berufsförderungswerken der neuen Bundesländer sind 2 600 bis 3 100 Ausbildungsplätze geplant. Das Lehrangebot soll sich auf Berufsbereiche erstrecken (kaufmännische, elektronische und maschinenbautechnische Bereiche), die den Absolventen gute berufliche Eingliederungschancen bieten.

Im übrigen stehen Rehabilitanden, die keiner besonderen behindertenspezifischen Betreuung während ihr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bedürfen, alle anderen beruflichen Bildungseinrichtungen offen.

#### **6.5.5 Entwicklung der Ausbildung von Meistern**

Ogleich die Meisteraus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gegenüber der Meisterausbildung nach Berufsbildungsgesetz der bisheri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 Reihe von Gemeinsamkeiten aufweist, sind die erforderlichen Veränderungen gravierend. Gemeinsamkeiten bestehen in den Voraussetzungen, der Dauer und der Struktur der Ausbildung. So war die Ausbildung zum Meister der Industrie, des Bauwesens und anderer Wirtschaftsbereiche für erfahrene Facharbeiter möglich, sie dauerte maximal zwei Jahre und bestand aus einem Grundlagenbildungsteil, einem Fachbildungsteil und einer zusätzlichen Spezialisierungsphase (Meisterpraktikum), die der Leitungsbefähigung der Meister diente.

Die entscheidenden Veränderungen betreffen die inhaltlichen Anforderungen, vor allem im fachrichtungsübergreifenden Teil der Ausbildung, sowie die Einführung der Meisterprüfungen, die nach dem BBiG und der HwO geregelt sind. Voraussetzung für den Meisterabschluß in der ehemaligen DDR war die Teilnahme an Lehrgängen auf der Grundlage verbindlicher Programme. Die Leistungen wurden kontinuierlich entsprechend einer Bewertungsregelung für die Meisterausbildung beurteilt. Eine besondere Prüfung wurde nicht durchgeführt. Mit der Einführung des BBiG und der HwO kommen die Vorschriften für die einzelnen Meisterprüfungen in Industrie und Handwerk zum Tragen. Zur Anpassung der Meisterausbildung an diese Prüfungserfordernisse werden vo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in den neuen Ländern bereits Ausbildungskonzepte verschiedener Träger aus dem westlichen Teil Deutschlands eingesetzt.

Schwierigkeiten für die Meisterausbildung ergeben sich aus dem Rückgang der entsprechenden Ausbildungsplätze. Die Ausbildung der Meister erfolgte bisher in betrieblichen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Erwachsenenbildung. Infolge von Konkursen, der Entflechtung von Kombinat und wirtschaftlicher Schwierigkeiten von Betrieben ist die Erhaltung der bisherigen Ausbildungskapazitäten für die Meisterausbildung gefährdet. Hinzu kommt, daß die Bildung neuer 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Zeit benötigt. Das betrifft sowohl die Fortbildung zum Meister als auch die Anpassungsfortbildung bereits ausgebildeter Meister.

Die Anpassungsfortbildung bereits ausgebildeter Meister ist zur Zeit eine besonders wichtige Aufgabenstellung. Begonnen mit derartiger Anpassungsfortbildung wurde bereits im 1. Halbjahr 1990, als der Übergang der DDR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beschlossen war. Damit rückten marktwirtschaftliche und betriebswirtschaftliche Inhalte in der Anpassungsfortbildung der Meister in den Vordergrund. Sie werden zunehmend durch notwendige rechtliche Inhalte ergänzt. Genutzt wurden hierzu seit Mai 1990 auch Rahmenvorgab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ehemaligen DDR, in denen bereits Orientierungen und Inhalte der Meisterausbildung der bisherig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triebswirtschaftlichen, rechtlichen, arbeitsorganisatorischen und leistungsbezogenen Ausbildungsinhalten Eingang gefunden haben. Für viele Meister, insbesondere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wird der Nachweis von arbeits- und berufspädagogischen Kenntnissen entsprechend der Ausbildereignungsverordnung eine wichtige Rolle spielen.

#### **6.6 Maßnahmenschwerpunkte und Projekte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n Frauen**

Auf Grund der verstärkten Erwerbsbeteiligung und Erwerbsorientierung der Frauen und der wachsenden Zahl von Berufsrückkehrerinnen nach einer familienbedingten Unterbrechung der Erwerbstätigkeit ist der Stellenwert und die Notwendigkeit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für Frauen in besonderem Maße gestiegen. Dabei geht es neben der Aktualisierung und Verbesserung beruflicher Qualifikationen um das Nachholen von Bildungsabschlüssen für Frauen ohne bzw. mit nicht verwertbarer Erstqualifikation.

Voraussetzung für eine gezielte Orientierung von Weiterbildungsangeboten an den Belangen der Frauen sind geschlechtsdifferenzierte Weiterbildungsdaten und eine Begleitforschung, die vorhandene Probleme und Zugangshemmnisse identifiziert und analysiert. Weiter ist die Verbesserung der Zusammenarbeit der für Weiterbildungsfragen Verantwortlichen erforderlich, um eine stärkere Berücksichtigung frauenspezifischer Belange zu ermöglichen, sowie die inhaltliche und didaktische Weiterentwicklung der Bildungsangebote im Rahmen von Forschungs- und Entwicklungsvorhaben durch Entwicklung übertragbarer Konzepte, die sich an den Bildungs- und Berufsbiographien der Frauen und ihren Weiterbildungswünschen orientieren.

Besondere Bedeutung hat hier die Entwicklung und Erprobung von Weiterbildungsmodulen und neuen Angebotsstrukturen und die Klärung und Verbesserung der Rahmenbedingungen, wie z. B. Zeit- und Organisationsfragen, Verbesserung des Zugangs und der Beratung sowie der Kinderbetreuung.

Im Rahmen der Konzentrierten Aktion Weiterbildung (KAW) stellen Fragen der Förderung von Frauen in der Weiterbildung einen besonderen Schwerpunkt dar (vgl. auch **Kapitel 6.11**).

reitung auf den Wiedereinstieg in Büroberufe entwickelt, das eine weitgehend freie Zeiteinteilung der Teilnehmerinnen ermöglicht. Durch dieses Angebot soll vor allem Frauen in ländlichen Regionen ein besserer Zugang zu entsprechenden beruflichen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eröffnet werden. Die Erprobung erfolgt ab Anfang 1991.

In dem Projekt „Neue Inhalte der Bürokommunikation in der Büro- und kaufmännischen Aufbauqualifizierung“ wird ein anspruchsvolles Weiterbildungsangebot für den beruflichen Wiedereinstieg zur Vorbereitung auf die Anforderungen des EG-Binnenmarktes in Kooperation mit international vernetzten Lern- und Übungsfirmen erarbeitet.

Weitere Forschungs- und Entwicklungsprojekte befassen sich mit Möglichkeiten der Erweiterung des Berufsspektrums in den „traditionellen“ Frauenberufen Arzthelferin, Verkäuferin, Bürogehilfin. Auf der Basis von Berufsumfeldanalysen sollen hier geeignete Weiterbildungskonzepte entwickelt werden, die den Frauen breitere Berufschancen eröffnen.

Ein neues Weiterbildungsmodell „Betriebsassistentin im Handwerk“ wird zur Zeit in Hamburg erprobt und wissenschaftlich begleitet. Es soll vor allem gewerblich-technisch ausgebildeten Frauen im Handwerk neue berufliche Perspektiven und Aufstiegsmöglichkeiten ermöglichen.

#### 6.6.2. Modellversuchsprogramm zur Nachqualifizierung

Zur qualitativen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r allem für arbeitslose Frauen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bzw. mit einer auf dem Arbeitsmarkt nicht verwertbaren Berufsqualifikation ha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ine „Modellversuchsreihe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von Erwachsenen, die k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haben und ein besonderes Arbeitsmarktrisiko tragen“ entwickelt, die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 wissenschaftlich betreut wird (vgl. auch Kapitel 6.10).

Die Erfahrungen zeigen, daß Umschulungsmaßnahmen nur erfolgreich sein können, wenn auch die Rahmenbedingungen für die Teilnahme entsprechend gestaltet werden. So ist z. B. ohne eine ausreichende Kinderbetreuung die Teilnahme von Frauen — vor allem von alleinerziehenden Frauen — nicht möglich.

#### 6.6.3. Verbesserung der Weiterbildung von Frauen im Rahmen der EG

Im Rahmen von IRIS, einem europäischen Netzwerk von beruflichen Weiterbildungsmaßnahmen für Frauen, geht es um einen systematischen Erfahrungs- und Informationsaustausch zwischen den verschiedenen nationalen, regionalen und örtlichen Stellen/Projekten zur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Chancen von Frauen. Das Programm basiert auf den Empfehlungen der EG-Kommission zur beruflichen Bildung vom November 1987.

In Verbindung mit IRIS erfolgt derzeit im Rahmen einer Pilotstudie eine Bestandsaufnahme und Konzeptentwicklung zum Aufbau eines bundesweiten Netzes der verschiedenen Initiativen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n Frauen.

Im Rahmen des 3. mittelfristigen Aktionsprogramms der Gemeinschaft (1991 bis 1995) zur „Chancengleichheit für Frauen und Männer“ ist eine neue Gemeinschaftsinitiative

der Kommission zur Förderung der Chancengleichheit von Frauen im Bereich Beschäftigung und berufliche Bildung (NOW) vorgesehen. Ziel ist u. a. die Förderung der Qualifikation von Frauen durch Maßnahmen zur beruflichen Bildung, die der beruflichen Wiedereingliederung dienen, insbesondere solche, die sich an weibliche Langzeitarbeitslose, an Frauen, die einen beruflichen Wiedereinstieg nach langer Berufspause anstreben, und an junge Frauen ohne Qualifikation richten.

#### 6.6.4. Weiterbildung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Über die Bemühungen zur gezielten Beteiligung von Frauen an allen beruflichen Weiterbildungsmaßnahmen hinaus sind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esondere Maßnahmen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n Frauen, d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on Arbeitslosigkeit bedroht sind“, eingeleitet worden:

- Entwicklung von Einstiegsmodulen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von Frauen, die eine Information und Beratung über berufliche Weiterbildungsangebote, Beschäftigungsperspektiven, Alltagsorganisation, Bewerbertraining u. a. einschließen. Dieses Weiterbildungsangebot soll eine individuelle Beratung ergänzen und vertiefen.
- Das Vorhaben „Entwicklung einer Konzeption für drei Grundmodule für Kurse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von Frauen zur Verbesserung ihrer beruflichen Chancen“. Hier werden Grundbausteine für Weiterbildungskurse zur Organisationsfachfrau, zur Wahrnehmung von Führungsaufgaben und zur Vorbereitung auf Existenzgründungen erarbeitet, um Frauen eine Umstellung auf die veränderte Arbeitsorganisation und -abläufe sowie den Einsatz neuer Technologien zu ermöglichen.
- Ein Weiterbildungskurs für EDV-Dozentinnen erfolgt in Verbindung mit dem Aufbau eines Netzes von informationstechnischen Bildungszentren für Frauen in verschiedenen Regionen. Hierdurch soll ein Weiterbildungs- und Beratungsangebot geschaffen werden, das als Anknüpfungspunkt für gezielte Weiterbildungsmaßnahmen für Frauen genutzt werden kann.

Im Rahmen einer Repräsentativuntersuchung sind Ende 1990 Daten über die Ausbildungs- und Berufssituation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sup>1)</sup> erhoben worden, die für weitere Planungen grundlegend sein sollen. An der Untersuchung haben sich 645 Frauen in 81 Betrieben aus 16 Branchen beteiligt.

Die vorliegenden Untersuchungsergebnisse zeigen, daß über 71 % der Frauen über einen Berufsabschluß verfügt und daß berufliche Weiterbildung für die Mehrzahl der erwerbstätigen Frauen selbstverständlicher Bestandteil ihrer bisherigen Berufsbiographie war. 58,3 % der Befragten haben sich nach Abschluß der Ausbildung weitergebildet. Ein Drittel hat dabei eine zusätzliche Berufsqualifikation erworben. Rund 25 % der Befragten nehmen innerbetriebliche Leitungsfunktionen wahr, auf die sie zumeist durch entsprechende Weiterbildungsmaßnahmen vorbereitet worden sind.

<sup>1)</sup> Berufliche Weiterbildung für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Anforderungen, bisherige Ausbildungs- und Berufssituation (noch nicht veröffentlicht)

Innerhalb des letzten Jahres haben 12% der Befragten an beruflicher Weiterbildung teilgenommen. Innerhalb der letzten fünf Jahre waren es insgesamt 29%. Berufliche Weiterbildung fand bisher vorwiegend (zu 76%) während der Arbeitszeit statt. Etwa 10% nutzten Weiterbildungsangebote am Abend oder am Wochenende, 6% nahmen an Fernunterricht teil.

Fast zwei Drittel der Frauen (62%) äußerten die Bereitschaft, sich durch Weiterbildung auf neue berufliche Aufgaben infolge der Umstrukturierung der Wirtschaft vorzubereiten. Die Erhebung zeigt aber auch, daß Kurzarbeit bisher noch kaum für Weiterbildung genutzt wurde: Von insgesamt 214 Befragten, die von Kurzarbeit betroffen waren, haben während dieser Zeit nur 20 Frauen an Weiterbildung teilgenommen.

Die Untersuchung gibt durch eine detaillierte Analyse der beruflichen Situation der Frauen Hinweise auf den bestehenden bzw. künftigen Weiterbildungsbedarf.

## 6.7 Energie und Umwelt

### 6.7.1 Aus- und Fortbildung für eine verstärkte Nutzung der rationellen Energieverwendung und erneuerbarer Energien

Im Rahmen der interministeriellen Arbeitsgruppe der Bundesregierung zur Reduzierung der CO<sub>2</sub>-Emissio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s zum Jahre 2005 wurde im Arbeitskreis I „Energieeinsparung“ und Arbeitskreis II „Gebäudebereich“ hervorgehoben, daß in den Ausbildungsordnungen umweltbezogene energiewirtschaftliche und -technische Fragen grundsätzlich bereits berücksichtigt sind. Unmittelbar betroffen sind etwa folgende Berufe: Verkehrsberufe, Berufe der Kraftnutzung, Berufe der Gebäude- und Klimatechnik sowie spezielle Ausbildungen für energieintensive Branchen (z. B. in der Metallverarbeitung und Elektrotechnik). Mittelbar sind die kaufmännischen Berufe betroffen. In all diesen Ausbildungen kann die Sensibilisierung der Auszubildenden für Energieeinsparung und rationelle Energieverwendung jedoch erhöht werden. Darüber hinaus kann die Thematik in den Ausbildungsordnungen, in denen sie lediglich als Generalziel formuliert ist, in Zukunft konkretisiert werden.

Für den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wurden konkrete Vorschläge vorgelegt für eine verbesserte Aus- und Fortbildung von Technikern und Handwerkern. Diese sind häufig nicht ausreichend auf die neuen Techniken vorbereitet. Deshalb sollen staatliche Förderprogramme möglichst von Maßnahmen begleitet werden, die bei diesen Zielgruppen energetische Kenntnisse und den Überblick über die Anwendungsmöglichkeiten verbessern.

Die Bundesregierung beschloß daher am 7. November 1990, daß der Aus- und Fortbildung bei der rationellen Energieverwendung und der Nutzung erneuerbarer Energien für die CO<sub>2</sub>-Minderung auch künftig eine besondere Bedeutung zukommt.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Ausbildung von Ingenieuren, Technikern und Handwerkern.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werden in Gesprächen mit Wirtschaft und Bundesländern auf eine Beseitigung etwaiger Defizite in den Lehrplänen oder bei der praktischen Umsetzung hinwirken.

### 6.7.2 Weiterbildungsbedarf im Arbeitsfeld Energie und Umwelt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at im Sommer 1990 ein Forschungsprojekt „Weiterbildungsbedarf im Arbeitsfeld Energie und Umwelt“ abgeschlossen. Ziel des Projektes war es, diesen Weiterbildungsbedarf einzuschätzen sowie Faktoren zu bestimmen, die den Bedarf beeinflussen. Ferner sollten Vorschläge entwickelt werden, wie Umweltschutz durch gezielte Weiterbildungsaktivitäten gefördert werden kann<sup>1)</sup>.

Die Arbeiten wurden in ausgewählten Bereichen des Handwerks und der Umweltberatung durchgeführt<sup>2)</sup>.

#### *Weiterbildungsbedarf — Einschätzung und Einflußfaktoren*

Neben beispielgebenden Initiativen zeigen viele der befragten Handwerksbetriebe trotz geltender Umweltschutzgesetze, öffentlicher Umweltschutzprogramme, vorhandener Umweltschutztechnik und daraus entwickelbarer Marktchancen eine noch relativ geringe unternehmerische Aktivität im Umweltschutz.

Wesentliche Gründe hierfür liegen nach den Ergebnissen der Untersuchung einerseits in fehlenden system- und umwelttechnischen Qualifikationen der Beschäftigten und andererseits darin, daß Marktanforderungen und -chancen noch zu wenig erkannt und genutzt und Umweltschutzlösungen in gewerksübergreifender und zwischenbetrieblicher Kooperation kaum erarbeitet und umgesetzt werden.

Auch die umweltschutzrelevante Weiterbildung spielt bei einem großen Teil der befragten Betriebe noch eine untergeordnete Rolle. Dies hängt mit den kleinbetrieblichen Arbeitsbedingungen zusammen, mit dem Umfang der erforderlichen Umstellung, dem sich viele Betriebe allein nicht gewachsen fühlen, aber auch mit den Absatzbedingungen für die handwerkliche Arbeit im Umweltschutz. Nach Aussagen der Betriebe behindern z. B. widersprüchliche Umweltschutzvorschriften das traditionelle Kundenverhalten, aber auch höhere Erstellungskosten den Zugang in den Umweltschutzmarkt. Diese Situation schränkt das Umweltschutzengagement der Betriebe und infolgedessen auch ihre Bereitschaft ein, in entsprechende Weiterbildung zu investieren. Schließlich wird die Zurückhaltung der Betriebe auch durch unzureichende Weiterbildungsangebote verursacht, die häufig zu wenig auf betriebliche Bedingungen zugeschnitten sind und zu wenig konkrete Hilfen für betriebliche Umweltschutzaktivitäten bieten.

Auch die Umweltberatung steht noch in den Anfängen. Gleiches gilt zur Zeit für andere Weiterbildungsgänge, wie z. B. für den Umweltschutztechniker/die Umweltschutztechnikerin oder Umweltingenieur/Umweltingenieurin.

#### *Maßnahmen*

Nach den Untersuchungsergebnissen müßte in den Weiterbildungsstrategien die Entscheidungs- und Handlungssituation des einzelnen Handwerksunternehmens bzw. der verantwortlichen Personen stärker berücksichtigt werden.

<sup>1)</sup> Über erste Ergebnisse wurde bereits in Kapitel 6.15 des Berufsbildungsberichts 1990 berichtet.

<sup>2)</sup> Inhaltlicher Schwerpunktbereich: Sanitär-, Heizungs- und Klimatechnik; regionale Schwerpunkte: Berlin, Hamburg und Koblenz.

## 8. Kosten, Finanzierung und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 8.1 Gesamt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Bildung

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Bildung entstehen bei den Arbeitgebern der privaten Wirtschaft, der öffentlichen Hand (z. B. für die eigenen Bediensteten und institutionelle Förderung von Trägern der beruflichen Bild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und bei Privatpersonen. Eine Gesamtübersicht über alle Aufwendungen der aufgeführten Kostenträger ist nicht verfügbar.

Zu den Kosten der Wirtschaft im Rahme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wird zur Zeit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ine Erhebung im gesamten Bundesgebiet durchgeführt. Für die Aufwendungen im Weiterbildungsbereich liegen bislang nur Informationen über Art, Höhe und Struktur der Weiterbildungskosten der Wirtschaft auf dem Gebiet der alten Bundesländer vor. Nach einer Studie des 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fielen 1987 allein für diesen Bildungsbereich (ohne Landwirtschaft und Freie Berufe) Kosten in Höhe von 26,2 Mrd. DM an. Für die Aufwendungen der Arbeitgeber der öffentlichen Hand im Weiterbildungsbereich gibt es bislang keine umfassenden Angaben. Auch die Ausgaben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durch die öffentliche Hand sind nur unzureichend erfaßt. Diese Aufwendungen (Haushaltsansätze) der öffentlichen Hand sind darüber hinaus mit den Berufsbildungskosten der Wirtschaft nicht vergleichbar.<sup>1)</sup> Zu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87, Seite 147

den Aufwendungen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durch Privatpersonen gibt es ebenfalls nur ungenaue Schätzgrößen.

Die Ausgab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die regelmäßig und umfassend dokumentiert werden, betragen für 1990 für dieses Aufgabengebiet 7.267,9 Mio. DM (Haushaltsansätze). Weitere 689 Mio. DM wurden durch einen Nachtragshaushalt zum 4. Quartal 1990 für die Wahrnehmung entsprechender Aufgaben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bewilligt. Über die einzelnen Haushaltsansätze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gibt die **Übersicht 100** Auskunft.

Darüber hinaus haben Länder und Gemeinden im alten Bundesgebiet 1990 für das berufliche Schulwesen Ausgaben von schätzungsweise 8 Mrd. DM bereitgestellt.

Eine Zusammenstellung über die Mittel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n den Jahren 1979 bis 1990 ist in **Tabelle 8/2** für das alte Bundesgebiet ausgewiesen.

#### 8.1.1 Gesamt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Ländern

Die Ausgaben des Staates (Staatshaushalt) für die Berufsbildung haben im Jahr 1980 ca. 800 Mio. Mark betragen, im Jahre 1989 waren es über 1,1 Mrd. Mark (vgl. **Übersicht 101**).

Für das Haushaltsjahr 1990 waren Ausgaben in Höhe von 531,5 Mio. DM geplant (Planungsansatz auf DM umgerechnet).

**Übersicht 100: Haushaltsansätze (1990)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für außerschulische Berufsbildungsmaßnahmen**

	Gesamtbetrag in Mio. DM	Darunter Nachtragshaushalt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DR <sup>1)</sup>
Individuelle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sbildung:	1 081,1	101,0
— Berufsausbildungsbeihilfen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	488,5	60,0
— 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 mit allgemeinbildenden Inhalten	55,0	—
— Berufsausbild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461,0	7,2
— Über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 Regionen mit überdurchschnittlichem Ausbildungsplatzdefizit	76,6	33,8
Individuelle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6 896,8	572,0
— Maßnahmekosten	2 726,0	400,0
— Unterhaltsgeld	3 683,9	172,0
— Einarbeitungszuschüsse	486,9	16,0
Institutionelle Förderung:	20,0 <sup>2)</sup>	
<b>Insgesamt</b>	<b>7 997,9</b>	<b>689,0</b>

<sup>1)</sup> Angesetzte Beträge aus dem noch nicht genehmigten Nachtragshaushalt für das 4. Quartal 1990

<sup>2)</sup> Ohne Nachtragshaushalt



## Übersicht 101: Ausgaben des Staates der ehemaligen DDR 1989 in Mio. Mark

	Ausgaben ohne Investitionen <sup>1)</sup> in Mio. Mark	Investitionen <sup>2)</sup> in Tausend Mark
Betriebliche Schulen (zuschußfinanziert)	311,154	—
Betriebliche Lehrlingswohnheime (zuschußfinanziert)	349,035	—
Betriebliche Schulen (haushaltsfinanziert)	8,100	950
Betriebliche Lehrlingswohnheime (haushaltsfinanziert)	3,924	76
Kommunale Berufsschulen	169,148	14698
Kommunale Lehrlingswohnheime	29,431	756
Berufsberatungszentren	17,685	155
Einrichtungen für die Weiterbildung des Berufsbildungspersonals	7,582	258
Ausbildung von Ausländern in kommunalen Einrichtungen	0,054	—
Praktische Berufsausbildung Landwirtschaft (zuschußfinanziert)	38,684	—
Jährliche zusätzliche Vergütung <sup>3)</sup>	16,918	—
Erstattung des Beitrags für gesellschaftliche Fonds <sup>4)</sup>	157,922	—
Beihilfen <sup>5)</sup>	20,833	—
<b>Gesamtausgaben</b>	<b>1 130,470</b>	<b>16 893</b>

<sup>1)</sup> Quelle: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sup>2)</sup> Quelle: Bundesminister der Finanzen

<sup>3)</sup> Lehrkräfte für den theoretischen Unterricht und Erzieher der betrieblichen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 sowie alle Beschäftigten der kommunalen Bildungseinrichtungen erhielten jährlich eine zusätzliche Vergütung.

<sup>4)</sup> Die betrieblichen Ausgaben für Beschäftigte der Aufgabenbereiche „Theoretische Berufsausbildung der Lehrlinge“ und „Bildung und Erziehung der Lehrlinge im Lehrlingswohnheim“ wurden aus dem Staatshaushalt der ehemaligen DDR erstattet.

<sup>5)</sup> Lehrlinge, die auf Grund ihrer sozialen Verhältnisse besonderer Unterstützung bedurften, erhielten eine monatliche Beihilfe von 50 Mark.

Mit der Einführung bundesdeutscher Gesetze und Verordnungen und des dualen Systems der Berufsausbildung sind Maßnahmen der Regierung der ehemaligen DDR und der Bundesregierung zur finanziellen Abstützung der beruflichen Bildung erforderlich geworden. Mit Beschluß des Ministerrates der ehemaligen DDR vom 22. August 1990 wurden 100 Mio. DM zur Ausbildungsplatzförderung bereitgestellt. 38 Mio. DM wurden auf Antrag der Bezirksverwaltungsbehörden zur Förderung auß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maßnahmen, die der Sicherung von Ausbildungsplätzen dienen, über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zugewiesen. Diese Mittel wurden unabhängig von Maßnahmen zur Förderung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verwendet. Es sind einmalige Zuwendungen.

Weitere umfangreiche Mittel wurden für die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Ost) — im zweiten Halbjahr 1990 über 330 Mio. DM — bereitgestellt (vgl. Kapitel 8.3).

## 8.2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m einzelnen

### 8.2.1 Förderung der Auszubildenden

#### 8.2.1.1 Auszubildende i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Auszubildende erhalten bei einer Ausbildung in Betrieben oder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eine Berufsausbildungsbeihilfe, wenn sie außerhalb des Haushalts der Eltern untergebracht sind und die Ausbildungsstätte von der Wohnung der Eltern aus nicht in angemessener Zeit erreicht werden kann. Bei außerhalb des Haushalts der Eltern untergebrachten volljährigen oder verheirateten Auszubildenden sowie in bestimmten sozialen Härtefällen kann von einer förderungsrechtlichen Verweisung auf die Wohnung der Eltern abgesehen werden. Zusätzlich können für Kinder, die sich in der Berufsausbildung befinden, in der Steuererklärung Ausbildungsfreibeträge geltend gemacht werden. Für Kinder, die das 18.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ben und zum Zweck der Berufsausbildung auswärtig untergebracht sind, gilt ein Freibetrag von 1 800 DM. Für über 18jährige, die noch bei ihren Eltern wohnen, liegt der Freibetrag bei jährlich 2 400 DM. Dieser erhöht sich bei auswärtiger Unterbringung auf 4 200 DM.

#### 8.2.1.2 Jugendliche in der Vollzeitausbildung

Jugendliche, die eine vollzeitschulische Ausbildung durchlaufen, können nach dem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 gefördert werden, sofern diese Ausbildung in einem mindestens zweijährigen Bildungsgang einen berufsqualifizierenden Abschluß vermittelt. Im übrigen können die Jugendlichen gefördert werden, wenn sie ausbildungsbedingt auswärts untergebracht sein müssen und ihnen die erforderlichen Mittel für ihren Lebensunterhalt und ihrer Ausbildung nicht anderweitig zur Verfügung stehen. Für Schüler von Berufsfachschulen sowie Fach- und Fachoberschulklassen sind Förderhöchstbeträge zwischen 310 DM und 670 DM je Monat vorgesehen.

### 8.2.2 Förderung der Ausbildungsbetriebe

Grundsätzlich tragen die Betriebe ihre Ausbildungskosten selbst. Dennoch bestehen Fördermöglichkeiten auf Grund von Bundesgesetzen und von verschiedenen Länderprogrammen.

#### 8.2.2.1 Bundesförderung

Betriebe können für die Ausbildung behinderter Jugendlicher Zuschüsse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bis zur Höhe der im letzten Ausbildungsjahr zu zahlenden monatlichen Ausbildungsvergütung erhalten.

Für die Ausbildung von Schwerbehinderten können Betrieben Leistungen aus dem Aufkommen der Ausgleichsabgabe nach dem Schwerbehindertengesetz (SchwbG) gewährt werden.

Zur Schaffung zusätzlicher Ausbildungsplätze, vornehmlich in Lehrwerkstätten, werden aus Mitteln des ERP-Sondervermögens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zinsgünstige Darlehen zur Verfügung gestellt (Haushaltsansatz 1990: 5,0 Mio. DM).

- d) Modernisierung von Bildungsgängen, -zielen und -inhalten
- e) Neue Lehr- und Lernmethoden und Lernhilfen
- f) Berufsbezogene Kreativität, Flexibilität u. a. Schlüsselqualifikationen
- g) Aus- und Fortbildung von Lehr- und Beratungspersonal
- h) Berufsbildungsangebote für Ausländer mit besonderer Nutzbarkeit in den Herkunftsländern
- i) Erweiterung des Berufsspektrums von Frauen
  - in technizierten Berufen
  - in traditionellen Frauenberufen
- j) Entwicklung von Weiterbildungsmodulen für eine kontinuierliche Berufsplanung von Frauen
- k) Verbesserung beruflicher Entwicklungs- und Aufstiegsmöglichkeiten für Frauen

Neue Modellvorhaben-Themenbereiche liegen durch ihre Relevanz nahe:

- a) Berufsbezogene Fremdsprachenangebote, u. a. Maßnahmen im Hinblick auf den EG-Binnenmarkt
- b) Berufsbildungsangebote zur Förderung von Leistungsbereitschaft und -fähigkeit
- c) Modularisierung und adressenspezifische Gestalt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d) Formen der Kooperation und didaktisch-methodischen Abstimmung zwischen Lernorten, die an Bildungsgängen arbeitsteilig mitwirken
- e) Qualifizierung für das Restaurieren, Sanieren älterer Bausubstanz und für den Denkmalschutz
- f) Computer als Lernhilfe, interaktives Lernen mit Medien
- g) Aus- und Fortbildungsangebote für Aussiedler und ehemalige Übersiedler
- h) Berufliche Weiterbildung im Verbund mit Klein- und Mittelbetrieben zur Verbesserung des Wiedereinstiegs von Frauen ins Erwerbsleben
- i) Berufliche Aus- und Weiterbildung von Frauen in flexiblen Zeit- und Organisationsformen

### 8.3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in Berlin (Ost)

Mit dem Beschluß der ehemaligen Regierung der DDR vom 22. August 1990 zur Ausbildungsplatzförderung für Schulabgänger im Lehrjahr 1990/91 sowie zur Vermeidung von Jugendarbeitslosigkeit wurden Mittel in Höhe von 100 Mio. DM als Sofortmaßnahme bereitgestellt:

1. Für zusätzliche Ausbildungsplätze wurde pro Ausbildungsplatz im Zusammenhang mit Existenzgründungen im Handwerk sowie der klein- und mittelständischen Industrie ein einmaliger Zuschuß in Höhe von 5000 DM gewährt.
2. Für Lehrlinge, die infolge von Zahlungsunfähigkeit, Konkursgefährdung oder Konkurs der bisherigen Ausbildungsbetriebe ihre Ausbildung in einem anderen Betrieb oder überbetrieblich fortsetzen, wurde eine Ausbildungsförderung von 3000 DM pro Lehrling zur Verfügung gestellt.

3. Für eine Überbrückungsfinanzierung, welche die Personalkosten und die Kosten für den Lehrbetrieb umfaßt, wurde die Nutzung von Werkstatt- bzw. Übungsplätzen in überbetrieblicher Trägerschaft durch einen Zuschuß von 4500 DM gefördert.

Die Mittel wurden über die Bezirksverwaltungsbehörden bereitgestellt.

Die bis zum 31. August 1990 bereitgestellten Mittel von 38 Mio. DM waren zum 1. Oktober 1990 zu 63 % gebunden. Bereits vorliegende Anträge wurden noch abgewickelt. Die gebundenen Mittel verteilen sich wie folgt:

Zuwendungsbescheid gesamt:	24,94 Mio. DM
Objekte gesamt:	1136
geförderte Ausbildungsplätze:	7968

Vergabestruktur

Kategorie 1	5000 DM	4,959 Mio. DM, 1019 Plätze
Kategorie 2	3000 DM	9,718 Mio. DM, 3909 Plätze
Kategorie 3	4500 DM	8,582 Mio. DM, 2534 Plätze

An die Stelle dieses Programms trat zum 3. Oktober 1990 das Vorsorgeprogramm der Bundesregierung zur Sicherung des Lehrstellenangebotes in den neuen Ländern (Kabinettsbeschluß vom 25. September 1990), und zwar:

- Zur Aktivierung vo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für Jugendliche, deren Ausbildungsvertrag wegen Betriebsstilllegung, Konkurs usw. gelöst wurde. Ausbildungsbetriebe, die mit diesen Jugendlichen neue Ausbildungsverträge abschlossen, erhielten einen einmaligen Zuschuß von 3000 DM. Mit den hierfür zur Verfügung gestellten 30 Mio. DM konnten bis zu 10000 Ausbildungsverhältnisse gefördert werden.
- Zur Versorgung von Schulabgängern ohne Berufsreife. Berufliche Vollzeitschulen erhalten Zuschüsse für die Nutzung berufspraktischer Einrichtungen — je 5000 DM pro Platz. Mit den bereitgestellten 30 Mio. DM konnten bis zu 6000 Plätze (ohne Personalkosten) bezuschußt werden.
- Zur Sicherung organisatorischer Voraussetzungen der Förderung sind 30 Organisationsberater mit Erfahrungen in der Durchführung von auß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maßnahmen eingesetzt worden. 4 Mio. DM standen hierfür zur Verfügung.

Die Zuständigkeit und Durchführung weiterer Maßnahmen im Volumen von 210 Mio. DM liegt bei der Arbeitsverwaltung:

- Förderung von bis zu 6000 Plätzen à 15000 DM für die 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die das 1. Jahr oder die Fortsetzung einer Berufsausbildung vermitteln (§ 40 c AFG) und
- Förderung vo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nach § 40 AFG für bis zu 8000 Jugendliche je 15000 DM.

Mit dem Vorsorgeprogramm der Bundesregierung wurden 1990 insgesamt 312 Mio. DM zur Verfügung gestellt.

Auf mittlere Sicht muß die Förderpolitik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n den neuen Ländern dazu beitragen, daß die Ausbildungsleistung der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 qualitativ und quantitativ mit den Strukturveränderungen des Wirtschafts- und Beschäftigungssystems mitwachsen kann. Dazu gehört die Schaffung moderner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die vorrangig, aber nicht ausschließlich der Ergänzung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dienen sollen. Die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sind möglichst bedarfsgerecht an den regional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auszurichten.

In einem ersten Schritt ist an fünf Standorten modellhaft die Ausstatt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mit einem Gesamtvolumen in Höhe von 10 Mio. DM gefördert worden.

Gefördert werden der Umbau, die Erweiterung und Modernisierung sowie die Ausstattung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Neubauten sollen zunächst nur gefördert werden, wenn entsprechende Gebäude und Werkstätten in erreichbarer Nähe nicht zur Verfügung stehen. Neben dieser investiven Förderung werden auch die laufenden Kosten für den Betrieb ein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 für einen begrenzten Zeitraum gefördert.

Zur Modernisierung der Unterrichtspraxis in den Berufsschulen wurden 28,5 Mio. DM zur Anschaffung von Lehr- und Lernmitteln, Computern und Fotokopiergeräten bewilligt.

Eine Schlüsselrolle kommt der fachlichen und pädagogischen Zusatzqualifizierung der Ausbilder zu. Mit einem Gesamtvolumen von 6,8 Mio. DM werden daher Qualifizierungsmaßnahmen für Ausbilder, Lehrer, Prüfer und sonstige Fachkräfte der beruflichen Bildung gefördert. Die Schwerpunkte der Qualifizierungsmaßnahmen liegen in den Bereichen kaufmännische Aus- und Weiterbildung, Umweltschutz, Methodik und Didaktik der Aus- und Weiterbildung und Organisation der beruflichen Bildung. Zur Qualifizierung von Bildungsmanagern, Weiterbildungsberatern und -dozenten werden Modellseminare entwickelt. Die Förderung beläuft sich hier auf 2,4 Mio. DM.

Zusätzlich werden zur Forcierung einer marktwirtschaftlich organisierten Weiterbildung 2,4 Mio. DM zur Verfügung gestellt. Die Maßnahmen umfassen hier die Anlauffinanzierung eines Bildungswerkes und einer zentralen Weiterbildungs- und Managementstelle sowie eine Informationskampagne zur Aktivierung der Weiterbildungsbereitschaft.

Für die mittelfristige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ind vorbehaltlich der Verhandlungen über den Haushalt 1991 insgesamt 900 Mio. DM vorgesehen. Die Eigenmittel der Wirtschaft, der Länder und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sind darin nicht enthalten.

## 8.4 Tarifvertragliche Finanzierungsregelungen in der Wirtschaf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Für die Tarifbereiche Bauwirtschaft, Garten- und Landschaftsbau, Steinmetz- und Steinbildhauerhandwerk sowie Dachdeckerhandwerk bestehen tarifvertraglich vereinbarte überbetriebliche Finanzierungsregelungen (vgl. Übersicht 102).

## 8.5 Ausbildungsvergütungen

### 8.5.1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Ermittlung der tarif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erfolgt auf der Grundlage der jeweils aktuellen Tarifvereinbarungen aus über 400 Tarifbereichen der Bundesrepublik.<sup>1)</sup>

Nach den Auswertungen des Bundesinstituts betragen 1990 die tarif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im Durchschnitt 750 DM pro Monat. Gegenüber dem Vorjahr stiegen sie um 8,1 % an; dies ist die stärkste Erhöhung der Ausbildungsvergütungen innerhalb der letzten 14 Jahre, die damit auch deutlich über dem relativ starken Zuwachs in den Jahren 1977 bis 1982 lag, in denen Vergütungsanhebungen von jeweils über 5 % im Durchschnitt erfolgten (vgl. Schaubild 14).

Zusätzlich zu den tariflichen Grundbeträgen werden in ca. 15 % der Tarifverträge erhöhte Ausbildungsvergütungen für Jugendliche ab 18 Jahren gezahlt. Werden auch diese altersabhängigen Zuschläge berücksichtigt, ergibt sich für 1990 ein Vergütungsdurchschnitt von 757 DM.

Zwischen den Ausbildungsbereichen bestehen teilweise erhebliche Unterschiede im Vergütungsniveau (vgl. Schaubild 15). In Industrie, bei Banken, Versicherungen und im Bergbau sowie im Baugewerbe waren die Vergütungen 1990 — wie in den Vorjahren — durchschnittlich am höchsten; in der Hauswirtschaft, in einigen Handwerksbereichen und im Handel fielen sie im Durchschnitt dagegen vergleichsweise niedrig aus.

Für 78 % der Auszubildenden lag die monatliche Vergütung zwischen 600 DM und 900 DM. Weniger als 600 DM erhielten 12 %, mehr als 900 DM 10 % der Auszubilden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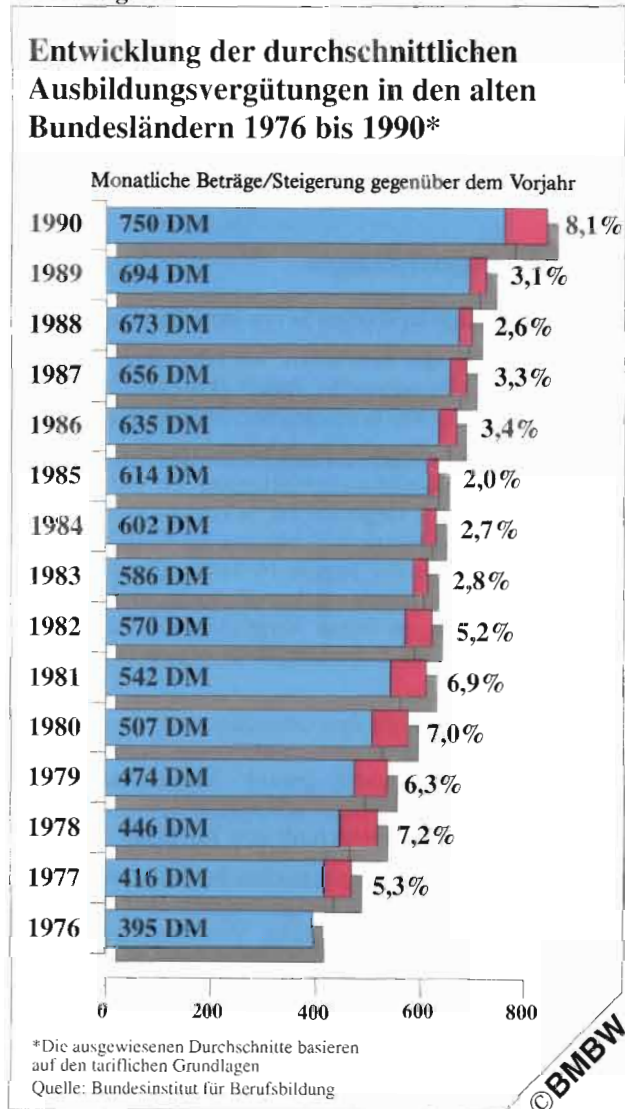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Seite 169

## Übersicht 102: Tarifvertragliche Finanzierungsregel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0: Gesamtbetrag, Ausbildungsverträge und Ausbildungsbetriebe sowie sonstige Angaben

Tarifbereich	Gesamtbetrag	Ausbildungsverträge	Ausbildungsbetriebe	Gewerbliche Arbeitnehmer	Betriebe insgesamt
	Mio. DM	Anzahl			
Baugewerbe	456,3	31 614	14 116	825 564	54 133
Garten-, Landschafts- und Sportplatzbau	7,5	3 521	ca. 1 300	38 128	ca. 5 400
Steinmetz- und Steinbildhauerhandwerk	4,1	ca. 1 250	ca. 1 000	11 500	ca. 4 200
Dachdeckerhandwerk	8,65	6 240	3 634	56 456	7 692
<b>Insgesamt</b>	<b>476,55</b>	<b>42 625</b>	<b>20 050</b>	<b>931 648</b>	<b>71 425</b>

Quelle: Sozialkassen der Tarifvertragsparteien

Abbildung 14



An der Spitze befanden sich 1990 die Vergütungen im Bauhauptgewerbe; den angehenden Maurern, Zimmerern, Straßenbauern, Stukkateuren/innen, Fliesen-, Platten- und Mosaiklegeren wurden durchschnittlich 1 235 DM pro Monat gezahlt. Relativ hoch waren auch die Ausbildungsvergütungen im Bergbau; die künftigen Bergmechaniker erhielten im Durchschnitt 1120 DM. Fast ebenso hoch ist die Ausbildungsvergütung für Versicherungskaufleute mit 1 094 DM.

Die mit Abstand geringsten Ausbildungsvergütungen hatten die Auszubildenden im Damenschneiderhandwerk mit 273 DM und im Herrenschneiderhandwerk mit 255 DM. Unter dem Durchschnitt liegen sie auch im Friseurhandwerk mit 453 DM und im Augenoptikerhandwerk mit 550 DM.

Bei den hier angegebenen Ausbildungsvergütungen ist zu beachten, daß es sich um Durchschnitte über die von Lehrjahr zu Lehrjahr ansteigenden Vergütungssätze handelt. Darüber hinaus differieren die Ausbildungsvergütungen auf Grund des bundesdeutschen Tarifsystems relativ stark nach Branchen und Regionen. Die Abweichungen von den ermittelten Durchschnitten können daher im Einzelfall beträchtlich sein.

### 8.5.2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eit der Inkraftsetzung des Berufsbildungsgesetzes in den neuen Ländern haben die Auszubildenden dort grundsätzlich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Vergütung. Solange tarifvertragliche Vereinbarungen noch nicht bestehen, orientiert sich die Höhe der Ausbildungsvergütungen an der fortgeltenden Verordnung über die Erhöhung der Entgelte der Lehrlinge vom 15. März 1990 (GBl. der DDR Teil I Nr. 18 S. 170). Nach dieser Verordnung ist die Höhe des Lehrlingsentgelts u. a. vom Schulabschluß der Auszubildenden abhängig. Lehrlinge mit Abschluß der 10. Klasse der allgemeinbildenden Polytechnischen Oberschule erhalten im jeweiligen Lehrhalbjahr folgende monatliche Vergütungen:

1. Bergbau — unter Tage

Lehrhalbjahr	1.	2.	3.	4.	5.	6.
Entgelt in DM je Monat	225	240	270	300	330	330

2. Bergbau — über Tage, Metallurgie, Gießereien

Lehrhalbjahr	2.	3.	4.	5.	6.	
Entgelt in DM je Monat	195	218	263	285	300	300

3. Alle anderen Bereiche und Zweige der Volkswirtschaft

Lehrhalbjahr	1.	2.	3.	4.	5.	6.
Entgelt in DM je Monat	180	195	225	270	300	300

Lehrlinge ohne Abschluß der 10. Klasse einschließlich Lehrlinge in einer Teilausbildung erhalten im jeweiligen Lehrhalbjahr folgendes monatliche Entgelt:

1. Bergbau — unter Tage

Lehrhalbjahr	1.	2.	3.	4.	5.	6.
Entgelt in DM je Monat	203	218	233	248	263	285

2. Bergbau — über Tage, Metallurgie, Gießereien

Lehrhalbjahr	1.	2.	3.	4.	5.	6.
Entgelt in DM je Monat	180	195	210	225	240	263

3. Alle anderen Bereiche und Zweige der Volkswirtschaft

Lehrhalbjahr	1.	2.	3.	4.	5.	6.
Entgelt in DM je Monat	158	173	195	210	225	225

Für Lehrlinge, die auf Grund ihrer sozialen Verhältnisse besonderer Unterstützung bedürfen, kann zusätzlich zum Lehrlingsentgelt eine Beihilfe von monatlich 50 DM gezahlt we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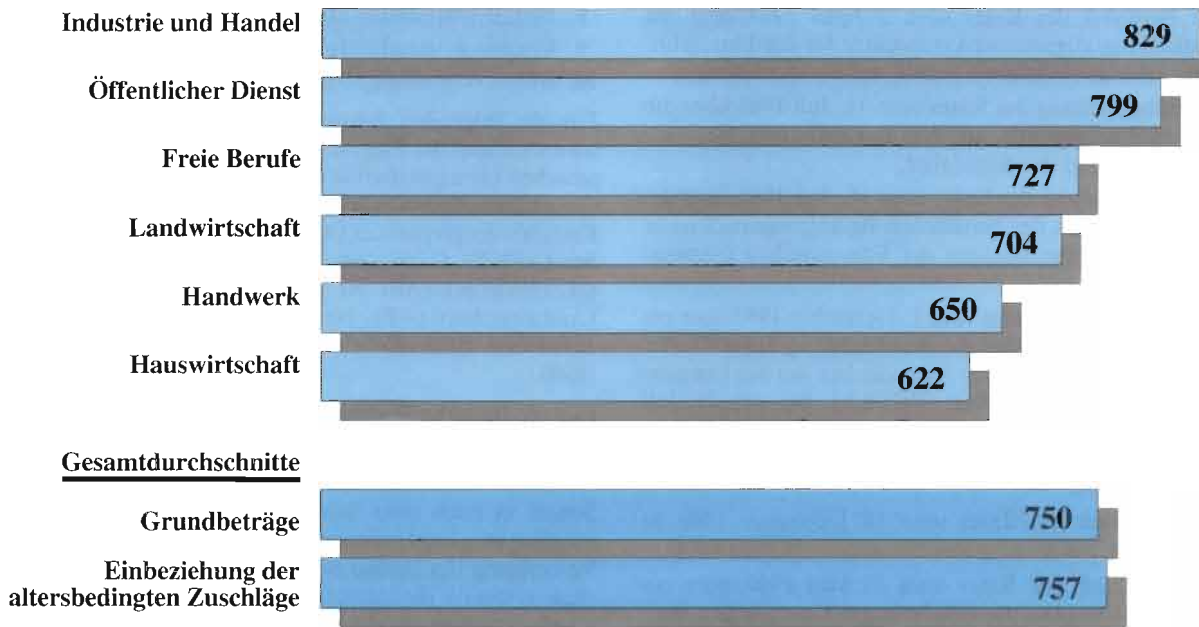
In zahlreichen, seit dem Inkrafttreten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am 1. Juli 1990 neu abgeschlossenen Tarifverträgen sind die Ausbildungsvergütungen bereits neu geregelt worden. Sie liegen nach dem Stand vom Jahresende 1990

— im ersten Ausbildungsjahr zwischen 200 DM und 626 DM

— im zweiten Ausbildungsjahr zwischen 260 DM und 957 DM

Schaubild 15

**Durchschnittliche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pro Monat nach Ausbildungsbereichen 1990\***



\*Für die einzelnen Ausbildungsbereiche sind die Durchschnitte unter Einbeziehung der altersbedingten Zuschläge ausgewiesen.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im dritten Ausbildungsjahr zwischen 300 DM und 1 208 DM.

Der Durchschnitt liegt bei etwa 340 DM im ersten, 400 DM im zweiten und 500 DM im dritten Ausbildungsjahr.

führt es im Jahr 1991 für das Basisjahr 1990 eine Erhebung der Kosten und des Nutzens der außerschulischen beruflichen Ausbildung durch.

**8.6 Stand der Kostenforschung auf dem Gebiet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Informationen über die Koste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gehören seit den 70er Jahre zu den grundlegenden Aussagen über das deutsche Berufsbildungssystem. Repräsentative Untersuchungen zu den beruflichen Bildungskosten wurden Anfang der 70er und 80er Jahre von unterschiedlichen Institutionen durchgeführt. In der Folgezeit wurden die Kosten der beruflichen Bildung regelmäßig hochgerechnet. Inzwischen hat das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für das Jahr 1987 die betrieblichen Weiterbildungskosten neu erfaßt. Entsprechende Kostenerhebungen für den Bereich der öffentlichen Hand und für die Privatpersonen stehen bislang noch aus. Ohne diese Vergleichsgrößen haben die für die Wirtschaft ermittelten Weiterbildungskosten nur einen begrenzten Aussagewert.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plant deshalb zur Behebung dieses Informationsdefizits zwei Forschungsprojekte zur Ermittlung der 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der öffentlichen Hand und der Privatpersonen. Außerdem

**9. Internationale Fragen der Berufsbildung**

**9.1 Zusammenarbeit in der EG**

Die Einheitliche Europäische Akte hat die Zielsetzung des Vertrages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vom März 1957 verstärkt und festgelegt, daß bis zum 31. Dezember 1992 der Binnenmarkt als ein Raum ohne Binnengrenzen verwirklicht werden soll, in dem der freie Verkehr von Personen, Waren, Dienstleistungen und Kapital gewährleistet ist.

Von der Verwirklichung des Binnenmarktes wird insbesondere eine Beschleunigung des Strukturwandels und eine rasch wachsende Nachfrage nach Arbeitskräften mit internationaler Kooperationsfähigkeit erwartet. Aus dieser Entwicklung ergeben sich wichtige Herausforderungen für die Bildungszusammenarbeit auf Gemeinschaftsebene und für die nationale Bildungspolitik. Die Bildungspolitik muß zur Verwirklichung des gemeinsamen Binnenmarktes beitragen, indem sie insbesondere die Möglichkeiten zur Qualifizie-



문서 번호 28

브란덴부르크 주 계속교육 개혁을 위해 -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1991 년 4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엔네 비어틀러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초대 교육부장이었던 마리안네 비어틀러가 계속교육의 개혁과 의미에 관해 연설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결손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속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적 절차 확립의 징표이다. 계속교육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계속교육 운영주체를 위한 대한 제도적 지원 및 프로젝트 지원은 계속교육법에 따라 규율한다. 프로젝트 지원에 있어 양성평등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1.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7-329





## 9.13 *Zur Reform der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Rede der Ministerin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Marianne Birthler vom 15. April 1991*

[...]

Die Organisation der Weiterbildung ist nicht primär eine Aufgabe des Staates, obgleich eine Verantwortung des Staates für die Weiterbildung nicht in Frage gestellt werden soll. Wenn in der Einladung von ersten Erfahrungen mit den neuen Strukturen der Weiterbildung die Rede ist, so setzt das voraus, daß sich in den neuen Ländern in den ersten sechs Monaten ihrer Existenz Weiterbildungsstrukturen entwickelt oder vorhandene verändert haben.

[...]

Die vorhandenen Weiterbildungsstrukturen waren Strukturen eines zentralisierten Systems und in ihrer Funktion weitgehend auf die Funktion des zweiten Bildungsweges beschränkt, soweit es sich um die Volkshochschulen handelte. Der zweite bedeutungsvolle Bereich der Weiterbildung wa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die nahezu ausschließlich in betriebliche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stattfand.

Der Übergang von diesem System auf ein Weiterbildungssystem in einer freiheitlichen Demokratie ist wie viele andere Bereiche des gesellschaftlichen Wandels eine äußerst spannende Angelegenheit.

[...]

Die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hat schwierige Monate hinter sich. Die Überführung der Volkshochschulen in die kommunale Trägerschaft war ein Vorgang, der mit erheblichen Problemen verbunden war. Die Situation der betrieblichen Weiterbildung ist entsprechend der wirtschaftlichen Lage der Betriebe äußerst prekär, wenn dies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überhaupt vorhanden sind.

[...]

Das Weiterbildungsgesetz des Landes Brandenburg soll die Grundlage bilden für ein Weiterbildungssystem, das im Weiterbildungsangebot eine Grundversorgung in Form öffentlich verantworteter Weiterbildung garantiert. Diese Grundversorgung muß auch für den ländlichen Raum erreicht werden, damit in diesem so wichtigen Bildungsbereich kein unerträgliches "Stadt-Land-Gefälle" entsteht. Die Grundversorgung muß als gleichwertige Bereiche umfassen:

- die nicht-berufliche, abschlußbezogene Weiterbildung (zweiter Bildungsweg),
-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 die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 die politische Weiterbildung,
- die kulturelle Weiterbildung,
- die personenbezogene Weiterbildung und Familienweiterbildung.

Die Weiterbildung ist ebenso wie das Schulsystem und die Hochschulen ein Bereich, der Verwirklichung des Grundrechts auf Bildung beiträgt. Bildung ist Emanzipation. Angesichts der für viele Bürger der ehemaligen DDR erlebbaren Defizite

muß dies deutlich betont werden. Der Bereich der Weiterbildung kann ganz erheblich dazu beitragen, daß das Lebensgefühl, "Deutsche zweiter Klasse" zu sein, abgebaut wird.

Der Weiterbildungsbereich hat damit auch die Aufgabe, zur Chancengleichheit beizutragen und Bildungsdefizite abzubauen. In diesem Verständnis kommt der Weiterbildung in den fünf neuen Ländern eine ganz besondere Bedeutung zu. In der Vergangenheit gab es hier weder eine Chancengleichheit noch ein realisierbares Recht auf Bildung. Vielfältige gesellschaftspolitisch definierte Selektionsmechanismen steuerten die individuellen Bildungschancen. Die dabei entstehenden Bildungsdefizite bei großen Gruppen der Bevölkerung waren auch durch persönliche Anstrengungen kaum zu kompensieren. An dieser Stelle möchte ich aber auch darauf hinweisen, daß die DDR in keiner Weise ein bildungspolitisches Ödland war. Ich denke hier an die vielen Anstrengungen, die außerhalb der offiziellen Bildungspolitik den Menschen attraktive Möglichkeiten geboten haben. Ich möchte auf die alternativen Angebote der Kirchen und der Opposition hinweisen. Es gab Sommerakademien, und nicht zu unterschätzen ist auch die Anstrengung sehr vieler Autodidakten im Land: Es gibt sehr viele Menschen, die ohne jedes Zeugnis, ohne die Möglichkeit, Abschlüsse nachzuweisen, jede sich bietende Möglichkeit der Bildung genutzt haben.

Diese Tatsache und das im Spektrum sehr begrenzte Angebot an Weiterbildung in der Vergangenheit läßt den Schluß zu, daß es hier in den nächsten Jahren einen "Weiterbildungsboom" geben wird, wenn nur ein attraktives Angebot an Veranstaltungen entsteht.

Neben der Aufarbeitung von Bildungsdefiziten muß Weiterbildung der Notwendigkeit Rechnung tragen, den vielen heute Erwerbslosen und von der Umstrukturierung der Wirtschaft unseres Landes Betroffenen in umfassender Weise neue Entwicklungsmöglichkeiten zu bieten. Dabei werden die Fragen der Finanzierung speziell solcher Weiterbildungsmaßnahmen gründlich zu durchdenken sein. Auch in der Frage der Teilnehmergebühren wird es gesonderte Regelungen geben müssen.

Ein ausgewogenes Weiterbildungsangebot stellt in der Zukunf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Sicherung des Demokratisierungsprozesses dar.

Angebote sind zu durchdenken im Zusammenhang mit den Defiziten, die bei uns entstanden sind. In der Verantwortung der Träger der Weiterbildung liegt es, einerseits dem unmittelbar erkennbaren Bedarf für Weiterbildungsangebote zu wecken und zu fördern, die eventuell aufgrund der Erfahrungen der Bevölkerung aus der Vergangenheit nicht sofort zu den gefragtsten gehören.

Ich erwarte, daß dazu insbesondere Veranstaltungen zur politischen Weiterbildung gehören. Neben de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die sich mit Staat und Gesellschaft unmittelbar befassen, hoffe ich, daß sich ökologische Fragen und Fragen der 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 ebenso als Weiterbildungsangebote etablieren.

[...]

Ich erwarte daher von den Verantwortungsträgern in den Kommunen - entsprechend der Empfehlung der kommunalen Spitzenverbände - insbesondere den Volkshochschulen als geistige, pädagogische und organisatorische Zentren im Gesamtsystem der Weiterbildung die gebührende Aufmerksamkeit zuzuwenden. Sie

sind die Einrichtungen, die ein öffentliches und flächendeckendes Weiterbildungsangebot unterbreiten müssen.

[...]

Ich bin mir wohl bewußt, daß es nicht sehr schwierig ist, die Bedeutung der Weiterbildung hier öffentlich zu deklamieren, andererseits jedoch um die Knappheit der Ressourcen für diesen Bereich zu wissen. Wenn Weiterbildung eine grundlegende Voraussetzung für die Entwicklung, insbesondere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ist und tatsächlich als eine fundamentale Gemeinschaftsaufgabe verstanden wird, dann müssen auch die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erforderlichen Mittel bereitgestellt werden. Auch dieser Seite der Problematik ist im Weiterbildungsgesetz Rechnung zu tragen.

Neben der bereits erfolgten Finanzierung von Lehrerstellen an Volkshochschulen zur Sicherung eines Angebotes zum nachträglichen Erwerb von schulischen Abschlüssen ist über das Weiterbildungsgesetz die institutionelle Förderung von Trägern der Weiterbildung und Projektförderung zu regeln. Projektförderung sollte in besonderer Weise Weiterbildungsmaßnahmen zur Förderung der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und im ökologischen Bereich berücksichtigen.

[...]

*Quelle:*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1991.

## 9.14 *Gesetz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vom 15. Dezember 1993*

### Grundsätze

#### § 1 Begriff und Stellung der Weiterbildung

(1) Die Weiterbildung ist ein integrierter und gleichberechtigter Teil des Bildungswesens. Weiterbildung im Sinne des Gesetzes umfaßt alle Formen der Fortsetzung, Wiederaufnahme oder Ergänzung organisierten Lernens außerhalb der Bildungsgänge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n und der berufsbildenden Schulen. Soweit die außerschulische Jugendbildung nicht anderweitig geregelt ist, gehört sie zur Weiterbildung im Sinne dieses Gesetzes. Die Hochschul- und Berufsbildung fallen nicht unter dieses Gesetz.

(2) Die Träger und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haben das Recht auf selbständige Lehrplangestaltung.

[...]



문서 번호 29

통일조약 37 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 년 6 월 14 일

담당자 / 기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회의 사무국

내용: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협회의 사무국이 통일조약 37 조에 의거해서 동독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교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의 기존의 교사들의 교사자격 인정은 각 주의 청소년담당국과 해당관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청은 교사들이 동독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교육의 입학자격, 내용, 기관 그리고 졸업시험 등이 유효규정에 부합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사직 직업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3 년 이상의 교사직을 수행한 직업경력은 6 개월 간의 보충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상관없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직의 호칭은 독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출처: Beschlus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SCHLUSSAMMLUNG DER KMK, BESCHLUSS-NR. 428.1  
R:\B1\KMK-BESCHLUSS\DDRERZ95-01-27.DOC

**Anerkennung von nach Rechtsvorschriften der ehemaligen DDR  
abgeschlossenen Ausbildungen in Erzieherberufen  
gemäß Art. 37 Einigungsvertrag**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4.06.1991 i.d.F. vom 27.01.1995)

1. Bewerber/Bewerberinnen, die nach Rechtsvorschriften der ehemaligen DDR eine Ausbildung in Erzieherberufen vor dem 1. Januar 1995 abgeschlossen haben, könne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Regelungen die bundesweite Anerkennung für den Teilbereich, für den sie sich qualifiziert haben, und die Anerkennung als staatlich anerkannter Erzieher/staatlich anerkannte Erzieherin erhalten.

Die im Gebiet der ehemaligen DDR erworbenen Berufsbezeichnungen in Erzieherberufen dürfen unabhängig davon in all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führt werden.

- 2.1 Teilanerkennungen werden nach folgender Zuordnung ausgesprochen:

im Gebiet der ehemaligen DDR erworbene Berufsbezeichnung:	Anerkennung für den Teilbereich:
Kindergärtner/Kindergärtnerin	Kindergarten <sup>1)</sup>
Horterzieher/Horterzieherin	Hort
Heimerzieher/Heimerzieherin	Heim
Erzieher/Erzieherin in Heimen und Horten	Heim und Hort
Erzieher/Erzieherin für Jugendheime	Heim
Gruppenerzieher/Gruppenerzieherin	Kindergarten <sup>1)</sup>
Erzieher/Erzieherin in Jugendwerkhöfen	Heim
Krippenerzieher/Krippenerzieherin	Krippe
Unterstufenlehrer/Unterstufenlehrerin mit der Befähigung zur Arbeit in Heimen und Horten	Heim und Hort
Unterstufenlehrer/Unterstufenlehrerin mit der Befähigung zur Arbeit im Schulhort	Hort
Unterstufenlehrer/Unterstufenlehrerin bzw. Lehrer/Lehrerin für untere Klassen	Hort
Freundschaftspionierleiter/Freundschaftspionierleiterin mit Lehrbefähigung	Hort

---

<sup>1)</sup> In Baden-Württemberg berechtigt die Teilanerkennung nicht zu Leitungsfunktionen.



- 2.2 Über die Teilanerkennung wird eine Bescheinigung mit folgendem Wortlaut ausgestellt:

"Es wird festgestellt, dass der an der Fachschule in ... (Ort der Schule) ... am ... (Zeugnisdatum) ... erworbene Abschluss als ... (in der ehemaligen DDR erworbene Berufsbezeichnung) ... eine gleichwertige Fachausbildung für den Teilbereich ... (siehe Zuordnung nach Ziffer 2.1)... im Tätigkeitsfeld des staatlich anerkannten Erziehers/der staatlich anerkannten Erzieherin ist. Diese Bescheinigung gilt nur in Verbindung mit dem oben genannten Abschlusszeugnis".

- 2.3 Bei Krippenerziehern/Krippenerzieherinnen wird die Bescheinigung durch folgenden Satz ergänzt:

"Das Zeugnis ist außerdem dem Abschlusszeugnis der Berufsfachschule für Kinderpflege gleichwertig<sup>2)</sup>.

Sofern in einem Land keine Berufsfachschulen für Kinderpflege bestehen, entfällt dieser Zusatz.

3. Die Anerkennung als staatlich anerkannter Erzieher/staatlich anerkannte Erzieherin und damit die Berechtigung, in allen sozialpädagogischen Tätigkeitsfeldern als pädagogische Fachkraft tätig zu sein, können Bewerber/Bewerberinnen erhalten, wenn sie an einer einjährigen Anpassungsfortbildung in mindestens einem nicht die vorliegende Qualifikation betreffenden Teilbereich teilgenommen und diese Fortbildung mit einem Kolloquium erfolgreich abgeschlossen haben. Eine mindestens dreijährige Berufspraxis wird auf die Dauer der Anpassungsfortbildung mit einem halben Jahr angerechnet. Die Anpassungsfortbildung umfasst Theorie- und Praxisanteile, wobei die Theorieanteile, bezogen auf eine halbjährige Fortbildung, mindestens 100 Stunden umfassen<sup>3)</sup>.
4. Nach Landesregelungen können Bewerber/Bewerberinnen die Anerkennung als staatlich anerkannter Erzieher/staatlich anerkannte Erzieherin auch erhalten, wenn sie mindestens das 25. Lebensjahr vollendet haben und eine mindestens zweijährige Berufspraxis in einer sozialpädagogischen Einrichtung nachweisen
- oder

wenn sie nach einer erfolgreichen Ausbildung eine mindestens fünfjährige erfolgreiche Berufspraxis absolviert haben

---

<sup>2)</sup> In Hessen gilt dies für die Ausbildung zum staatlich geprüften Kinderpfleger/zur staatlich geprüften Kinderpflegerin.

<sup>3)</sup> In Baden-Württemberg werden nur die Erzieherberufe mit Zuordnung zum Teilbereich Kindergarten oder zum Teilbereich Krippe einbezogen. Bei Erzieherberufen mit anderer Zuordnung können Teile der Ausbildung für eine Nachqualifikation anerkannt werden.

und jeweils

an anerkannten Maßnahmen der Erzieherfortbildung im Umfang von mindestens 100 Stunden (insbesondere in den Bereichen Kinder- und Jugendhilferecht sowie Psychologie und Pädagogik des Kinder- und Jugendalters in einem Teilbereich, der nicht der bereits erworbenen Qualifikation entspricht) erfolgreich teilgenommen haben.

Wird die Berufspraxis in einer sozialpädagogischen Einrichtung in einem Beitrittsland abgeleistet, müssen mindestens 6 Monate nach dem 3. Oktober 1990 absolviert worden sein. Sie ist vom jeweiligen Träger der Einrichtung bzw. dem zuständigen Jugendamt zu bestätigen.

5. Die nach den Nummern 2 bis 4 dieser Vereinbarung ausgestellten Bescheinigungen werden von den Ländern gegenseitig anerkannt, die nach Nummer 4 ausgestellten Bescheinigungen allerdings mit der Maßgabe, dass einzelne Länder zusätzlich das erfolgreiche Bestehen eines Kolloquiums verlangen können<sup>4)</sup>.
6. Im übrigen bleibt die Rahmenvereinbar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von Erziehern/Erzieherinnen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4.09.1982) unberührt.

Prüfungsnachweise, welche die Rahmenvereinbarungen bereits erfüllen, werden uneingeschränkt anerkannt.

---

<sup>4)</sup> In Baden-Württemberg gilt die Anerkennung mit den Einschränkungen gemäß Fußnoten 1) und 3).

문서 번호 30

통일독일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발췌]

1991 년 12 월 10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목표가 정의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대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현안과 미래에 대한 질문, 특히 통일된 독일에서의 정치적이자 사회적 통합이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한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고도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받아들여지도록 기여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가 연습되어야 하며, 갈등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과 합의에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배양되어야 한다.

출처: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1773



##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Gliederung

	Seite
1. <b>Einleitung</b> .....	3
2 <b>Ziele und Aufgaben politischer Bildungsarbeit</b> .....	3
2.1 Ziele .....	3
2.2 Grundlegende Elemente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	4
2.3 Neue Herausforderungen für die politische Bildung .....	6
2.3.1 Bildungspolitische Maßnahmen zur gesellschaftlichen Integration im vereinigten Deutschland .....	6
2.3.2 Europa .....	10
2.3.3 Aussiedler .....	11
2.3.4 Ausländer .....	11
2.3.5 Industriegesellschaft .....	11
2.3.6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	12
2.3.7 Gewalt .....	12
3. <b>Politische Jugend- und Erwachsenenbildung</b> .....	13
3.1 Vorbemerkung .....	13
3.2 Schule .....	13
3.3 Staatliche und staatlich geförderte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 dungsarbeit .....	14

	Seite
3.3.1 Bundesressorts (Bundesminister für Frauen und Jugend,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 . . . .	14
3.3.2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andere staatliche Institutionen politischer Bildung . . . . .	17
3.4 Freie Träger der außerschulischen politischen Bildungsarbeit . . . . .	19
4. <b>Adressaten und Methoden politischer Bildung</b> . . . . .	<b>21</b>

##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1. Einleitung

Der demokratische Staat und die ihn tragende Gesellschaft sind auf das Engagement und die Kompetenz ihrer Bürger angewiesen. Auch die freiheitlichste Verfassung müßte leere Formel bleiben, wenn die Menschen nicht fähig und bereit wären, sie mit Leben zu erfüllen. Eine wichtige Aufgabe hat dabei die politische Bildung; ihr Ziel ist die Vermittlung von demokratischem Bewußtsein, von Kenntnissen und der Fähigkeit, an politischen Prozessen mitzuwirken.

Politische Bildung ist nur in einem freiheitlich verfaßten Staat möglich. Sie ist allerdings nur ein – wenn auch wesentliches – Element politischer Sozialisation und in ihrer Wirksamkeit abhängig von der Politikgestaltung. Wie alle Formen von Bildung ist auch die politische Bildung langfristig angelegt; kurzfristige Änderungen von Einstellungen und Haltungen können und sollten von ihr nicht erwartet werden. Politische Bildung ist dah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ein Element lebenslangen Lernens konzipiert und hat ihren festen Stellenwert in Schule, Berufsausbildung, Hochschule und Weiterbildung. Ein dichtes Netz staatlicher und staatlich geförderter gesellschaftlicher Träger sorgt für ein umfassendes pluralistisches Angebot politischer Bildungsmaßnahmen. Politische Bildung dient nicht der Darstellung der Tätigkeit von Regierungen und anderen staatlichen Institutionen. Im Unterschied zur Indoktrination diktatorischer Staaten, die den Bürger einer Einheitsmeinung zu unterwerfen suchen, ist politische Bildung in der Demokratie auf Selbstbestimmung, Erkenntnis eigener Interessen und Pflichten, verantwortliches Handeln in Staat und Gesellschaft und Freiwilligkeit ausgerichtet.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hat die politische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en bedeutenden Beitrag zur demokratischen Bewußtseinsbildung und zur politischen Kultur geleistet. Seit dem letzten 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68 hat sich die politische Bildung nach kontroversen Diskussionen in den 70er Jahren inhaltlich, didaktisch und methodisch sehr differenziert. Heute steht den interessierten Bürgern ein umfassendes Bildungsangebot in Form von Tagungen und Publikationen mit einem breiten Themenangebot zur Verfügung.

Im Unterschied zur Vergangenheit muß sich politische Bildung in den 90er Jahren stärker mit aktuellen politischen Problemen und mit Zukunftsfragen beschäftigen: Die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Auswirkungen technologischer Entwicklungen müssen ebenso behandelt und problematisiert werden wie ökologische Aspekte. Vor allem aber muß im Mittelpunkt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im vereinigten

Deutschland stehen. Nach dem Niederreißen der Mauer und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muß politische Bildung ihren Beitrag dazu leisten, daß aus den bisherigen beiden Teilen Deutschlands ein geistiges und gesellschaftliches Miteinander wird.

### 2. Ziele und Aufgaben politischer Bildungsarbeit

#### 2.1 Ziele

Politische Bildung hat insbesondere folgende Ziele zu verfolgen:

- möglichst objektiv über Faktoren und Funktionszusammenhänge politischer, gesellschaftlicher und ökonomischer Prozesse zu informieren;
- zur Akzeptanz der Grundwerte der freiheitlichen und pluralen Demokratie – unbeschadet der stets möglichen Kritik an ihrer konkreten Verwirklichung – beizutragen;
- zu verdeutlichen, daß die freiheitliche und plurale Demokratie die einzige politische Ordnung ist, in der eigenständiges, rationales und selbstverantwortliches Handeln möglich und systemkonform ist und die die größten Chancen zur optimalen Entwicklung des Einzelnen bietet;
- das Wesen demokratischer Spielregeln bewußt zu machen und demokratische Verfahrensweisen einzuüben, Konfliktfähigkeit und Konsensbereitschaft auszubilden;
-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in politischen Alternativen zu denken, zu fördern und das politische Problembewußtsein, die politische Urteilsfähigkeit und Urteilsbereitschaft auszubilden;
- die Fähigkeit zu politischem Handeln zu entwickeln und die Chancen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Einflußnahme zu erkennen und zu nutzen;
- sprachliche und nicht-sprachliche Kommunikation auf ihren ideologischen Hintergrund zu durchschauen;
- die Fähigkeit, die eigene Rechts- und Interessenlage ebenso zu erkennen, wie die Standortgebundenheit eigener und fremder Aussagen;
- die Befähigung, eigene Interessen im Rahmen der Regeln der pluralistischen Demokratie wahrzunehmen und Rücksicht auf die Interessen anderer zu nehmen;
-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zu fördern, mit Menschen unterschiedlicher Herkunft und Kultu-

ren friedlich und verständnisvoll zusammenzuleben;

- einen Beitrag zum Abbau nationaler Egoismen zu leisten;
-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reflektiertes Engagement und verantwortungsbewußtes politisches und gesellschaftliches Handeln zu entwickeln.

Die Gesamtheit dieser Bildungsziele ist ständiger Auftrag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um die sich alle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bei ihren Maßnahmen zu bemühen haben. Sie kann nur durch einen umfassenden politischen Sozialisationsprozeß erreicht werden.

## 2.2 Grundlegende Elemente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m Zentrum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standen und stehen die Vermittlung grundlegender Kenntnisse, Wertvorstell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demokratischen Gemeinwesen. Gerade vor dem Hintergrund der geistigen Integration der Bürg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 die differenzierte Ausformung der politischen Kultu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n all ihren Verästelungen nicht kennen können, muß die Arbeit auf diesem Gebiet noch verstärkt werden. Mit der Vermittlung der demokratischen Grundwerte, die das Ergebnis jahrhundertelanger europäischer Grund- und Menschenrechtsdiskussionen sind, können den Bürgern zugleich wesentliche Elemente der Geistesgeschichte nahegebracht werden.

Demokratie beinhaltet nicht nur ein Verfahrensregelwerk, sondern setzt ein spezifisches Menschenbild, bestimmte Grundhaltungen und Einstellungen voraus. Es genügt daher nicht, nur die Regeln zu lehren, sondern es müssen die Grundwerte vermittelt und entsprechendes Verhalten eingeübt werden. Politische Bildung hat die Möglichkeiten, aber auch die Grenzen von Demokratie aufzuzeigen: Der demokratische Staat und die demokratische Gesellschaft bieten denjenigen Partizipationschancen und Möglichkeiten zur Interessenvertretung, die sie nutzen können und möchten. Demokratische politische Kultur verlangt von den Bürgern die Bereitschaft und die Fähigkeit sowohl zum Konflikt als auch zum Konsens. Zum Wesen der Demokratie gehören der offene und öffentliche Austrag von Konflikten und Interessen, aber am Ende der Interessenausgleich. Demokratie bietet den Minderheiten Schutz und Rechte sowie die stete Chance, zur Mehrheit zu werden. Demokratie verlangt vom einzelnen Bürger aber auch, seine Minderheitenposition zu ertragen und die Entscheidung der Mehrheit anzuerkennen. Politische Bildung hat die Vorteile von offener Interessenvertretung und Konfliktaustragung in der Demokratie mit all ihren scheinbaren Reibungsverlusten im Vergleich zu den verdeckten und unkontrollierbaren Kontroversen in nach außen scheinbar einheitlichen autoritären und totalitären Systemen herauszuarbeiten.

Ziel politischer Bildung muß die reflektierte Bejahung des demokratischen Staates und der freiheitlichen Gesellschaft sein. Eine idealisierte und harmonisier-

rende Darstellung der Grund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liefe Gefahr, im Detail durch die Realität widerlegt zu werden und dadurch eher Ablehnung als Zustimmung oder gar Identifikation hervorzurufen. Demokratie muß daher wirklichkeitsnah und mit all ihren Vorzügen und Problemen dargestellt werden. Dann wird deutlich, daß sie die Grundordnung ist, die zwar keineswegs Fehler und Konflikte vermeidet, die jedoch den Menschen den größtmöglichen Freiheitsraum sichert.

Die Entwicklung eines unverkrampften Staats- und Verfassungsbewußtseins ist eine weitere zentrale Aufgabe politischer Bildung. Das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arantiert die individuellen und kollektiven Freiheitsrechte und legt die Regeln des Regierungssystems fest; es sichert eine offene Gesellschaft und läßt nur eine sozialverantwortliche, freiheitliche Grundordnung zu. Es bietet den Bürgern Partizipationsmöglichkeiten und sichert die Arbeit der frei gewählten Repräsentanten des Volkes.

Im Unterschied zur Verfassung der Weimarer Republik wurde das Grundgesetz rasch mit Leben erfüllt, so daß es heute zur Grundlage einer differenzierten, demokratischen politischen Kultu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orden ist.

Das parlamentar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ohne politische Parteien nicht denkbar. Politische Bildung muß daher die Rolle der Parteien in der pluralistischen Demokratie aber auch die der Verbände verdeutlichen. In diesem Zusammenhang hat sie sich auch mit der Gefahr von Parteidomigkeit und Politikverdrossenheit in Teilen der Bevölkerung auseinanderzusetzen und ihr entgegenzuwirken.

An den Beispielen diktatorischer Staate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müssen die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 selbstverständlichen Güter wie Rechtsstaatlichkeit und die sie implizierende Rechtssicherheit herausgearbeitet werden, die ohne Grundkenntnisse nicht zu nutzen sind.

Die Geschichte Deutschlands in diesem Jahrhundert enthält ein schwieriges Erbe. Notwendig ist daher ein unvoreingenommenes, zugleich aber auch problemorientiertes Verhältnis zum deutschen Geschichte. Es gilt Verständnis dafür zu wecken, daß die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benso wie die ihrer Nachbarstaaten in Auseinandersetzung mit Geschichte und der Rolle Deutschlands in der Weltpolitik dieses Jahrhunderts gestaltet wird und daß auch die Bürger mit historischen Problemen befaßt werden. Gerade der deutsche Einigungsprozeß hat wieder verdeutlicht, wie stark Geschichte in die Gegenwart hineinwirkt.

Politische Bildung hat dabei nicht nur Ursachen und Folgen historischer Entscheidungen und Entwicklungen zu beleuchten, sondern auch und gerade Kontinuitäten und Brüche in der deutschen Geschichte herauszuarbeiten. Das Bewußtsein von Wandelbarkeit und historischen Wandlungsprozessen kann sich auch auf die Diskussion aktueller politischer Probleme vertiefend und mäßigend auswirken.



문서 번호 31

연방 경제부에 고용된 구동독 경제통상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자료

1991 년 12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경제부 국회차관 리들; 연방의회의원 비스만(기민당)

내용:

연방 경제부 차관 리들은 통일 이후 연방 경제부 베를린 지청에 고용된 395 명에 달하는 구동독 경제통상부 및 환경에너지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연방 경제부가 어떠한 재교육 및 자격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 중 181 명은 본 혹은 베를린에 무기한으로 고용된 상태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1993 년도 7 월에 종료되는 시한부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교육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그 교육 중 일부는 베를린 지청에서 직접 실시되었다.

출처: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1872



36. Abgeordneter  
**Reinhard Weis**  
(Stendal)  
(SPD)
- Welche konkreten Maßnahmen hat die Bundesregierung ergriffen, um der konventionellen bulgarischen Energieversorgung über den nächsten Winter zu helfen?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Klaus Beckmann vom 10. Dezember 1991**

Der Bundesregierung ist bekannt, daß es Probleme bei der Stromversorgung in Bulgarien gibt, die sowohl die konventionellen Anlagen als auch die Kernkraftwerke betreffen.

Angesichts des enormen finanziellen Bedarfs der Länder Mittel- und Osteuropas einschließlich der Sowjetunion können wirksame Hilfsmaßnahmen nur im internationalen Rahmen erfolgen. Die Bundesregierung hat sich bei ihren westlichen Partnern nachhaltig für entsprechende Hilfsprogramme auch für Bulgarien eingesetzt. So sieht das Phare-Hilfsprogramm der 24 Industrieländer und der EG für Ost- und Mitteleuropa entsprechend dem Beschluß vom 17. Juli 1991 für Bulgarien eine Summe von 11,5 Mio. ECU als Soforthilfeprogramm zur Gewährleistung der nuklearen Sicherheit im Atomkraftwerk Kosloduy vor. Am 9. Oktober 1991 wurde darüber hinaus ein weiteres umfassendes Hilfsprogramm für die Energiewirtschaft Bulgariens im Umfang von 10 Mio. ECU (1991: 2 Mio. ECU, 1992: 8 Mio. ECU) durch den Phare-Verwaltungsausschuß bestätigt.

Der finanzielle Anteil der Bundesrepublik am Phare-Hilfsprogramm ist mit 28 % der größte.

Darüber hinaus hat die Bundesregierung der bulgarischen Seite bilaterale Konsultationen und Expertenberatung zu energiepolitischen Fragen angeboten.

37. Abgeordneter  
**Matthias Wissmann**  
(CDU/CSU)
- Welche Dauer haben die Verträge der 395 Mitarbeiter der ehemaligen DDR-Ministerien für Wirtschaft, Handel und Versorgung sowie Energieabteilung des früheren Umweltministeriums, die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in der Außenstelle Berlin beschäftigt?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Erich Riedl vom 16. Dezember 1991**

Am 1. Januar 1992 werden in der Außenstell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in Berlin noch 353 Arbeitnehmer aus den früheren DDR-Ministerien für Außenwirtschaft, für Handel und Tourismus sowie aus der Energieabteilung des Umweltministeriums beschäftigt. Davon haben 140 einen Dauervertrag, 32 einen Zeitvertrag bis zum Jahresende 1992 und 181 einen Zeitvertrag bis zum 30. Juni 1993. Darüber hinaus werden 41 Mitarbeiter der genannten ehemaligen DDR-Ministerien mit einem Dauervertrag i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in Bonn beschäftigt.

38. Abgeordneter  
**Matthias Wissmann**  
(CDU/CSU)
- Welche Fort-, Weiterbildungs- und Qualifizierungsmaßnahmen führ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ür diese 395 Mitarbeiter durch?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Erich Riedl  
vom 16. Dezember 1991**

Die Außenstelle des Ministeriums führt als eigene Fortbildungsveranstaltungen durch:

- Seminar zum Haushaltsrecht
- Seminar für Informationstechnik
- Seminar für Sekretärinnen
- Dienstbegleitender Sprachunterricht.

Den Mitarbeitern der Außenstelle stehen alle Seminare der 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offen. Speziell für diesen Personenkreis wird der Lehr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handeln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sowie das darauf aufbauende Seminar „Verwaltung“ für den höheren Dienst angeboten.

Außerdem können die Mitarbeiter des gehobenen Dienstes einen von der Fachhochschule des Bundes angebotenen Kurs sowie die Mitarbeiter des mittleren Dienstes einen vom Bundesverwaltungsamt angebotenen Kurs jeweils zum rechtsstaatlichen Verwaltungshandeln wahrnehmen.

39. Abgeordneter **Matthias Wissmann** (CDU/CSU) Welche Dauer haben die Verträge der vier für den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als Berater tätigen Experten auf dem Gebiet des Innen- und Außenhandel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Erich Riedl  
vom 16. Dezember 1991**

Die Laufzeit der Verträge für die als Berater tätigen Experten für Handels- und insbesondere Außenhandelsfragen aus ehemaligen DDR-Ministerien läuft in einem Fall bis zum 31. Dezember 1991, in einem Fall bis zum 30. September 1992 und in zwei Fällen bis zum 31. Dezember 1992.

40. Abgeordneter **Matthias Wissmann** (CDU/CSU) Welche der Berater sollen in ein Dauerbeschäftigungsverhältnis übernommen werden?

**Antwort des Parlamentarischen Staatssekretärs Dr. Erich Riedl  
vom 16. Dezember 1991**

Keine.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의 전개현황 -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의 보고 [발췌]

1992 년 3 월 16 일

담당자 / 기관: 연방 및 주 공동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위원회 (BLK)

내용:

이 문서는 연방연구지원위원회(BLK)가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의 변화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체제에서는 직업교육이 교육부문 중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었다. 직업교육에도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와 국가의 경제구조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직업교육은 서독의 이원화된 직업교육제도와는 그 구조나 직업교육의 목표, 방법 및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1990 년도 직업교육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동일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고 교육 내용도 통일되었고, 국가적으로 승인된 직업교육을 요구하는 직업군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출처: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199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12-315



4.3 Die oberste Schulaufsichtsbehörde kann die Befugnis nach Nr. 4.2 dieses Erlasses auf die untere Schulaufsichtsbehörde bzw. auf die Schulleiter der beruflichen Schulen delegieren.

## 5. Schulinterne Fortbildung - Pädagogische Klausurtagung

5.1 Neben den zentralen und regionale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wird in jeder öffentlichen Schule schulinterne Lehrerfortbildung in eigener Verantwortung geplant und durchgeführt.

5.2 Je Schulhalbjahr, an beruflichen Schulen je Schuljahr, ist an jeder Schule an einem Unterrichtstag eine schulinterne Fortbildung als Pädagogische Klausurtagung durchzuführen.

5.3 In Vorbereitung dieser Pädagogischen Klausurtagung legen die Schulleiter der jeweils zuständigen Schulaufsichtsbehörde ein durch die Lehrer- und die Schulkonferenz beschlossenes Programm vor.

5.4 An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kann in besonders begründeten Fällen eine Pädagogische Klausurtagung an zwei aufeinanderfolgenden Unterrichtstagen im Schuljahr durchgeführt werden.

Diese ist inhaltlich genau zu begründen und durch die zuständige Schulaufsichtsbehörde zu genehmigen.

## 6. Schlußbestimmungen

[...]

*Quelle:* Mitteilungsblatt des Kultusministeriums MV Nr. 11. S. 451.

## 9.8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s dem Bericht der BLK vom 16. März 1992*

[...]

Das Berufsbildungswesen der ehemaligen DDR stand einerseits in der deutschen Berufsbildungstradition, d.h. charakteristisches Merkmal war die betriebszentrierte Ausbildung. Es war andererseits geprägt durch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und die Wirtschaftsstruktur des Landes. Die Berufsausbildung in der ehemaligen DDR unterschied sich sowohl in ihrer Struktu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rechtliche Zuordnung der Lernorte) als auch hinsichtlich der Ausbildungsziele, -inhalte, -methoden und -dauer vom dualen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Beginn des Ausbildungsjahres 1990 gelten für die duale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 die gleichen rechtlichen und inhaltlichen Bestimmungen wie im übrigen Bundesgebiet, soweit nicht im Einigungsvertrag Übergangsregelungen vorgesehen sind. Damit sind umfassen die

Grundlagen für die Ausbildung in den staatlich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geschaffen worden. Diese Umstellung bedeutet eine große Herausforderung für die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Im folgenden werden ausgewählte Probleme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fgegriffen und Ansätze zu ihrer Lösung aufgezeigt.

## **I. Koordinierung vordringlicher Maßnahmen zur Sicherung der Ausbildungsplätze in Betriebe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und beruflichen Schulen**

### **Ausgangslage und Probleme**

[...]

Auch im Jahr 1992 steht die duale Berufsausbildung vor einer großen Bewährungsprobe. Die Zahl der Bewerber um Ausbildungsplätze wird voraussichtlich erheblich über der des Jahres 1991 liegen, weil

- in vier Ländern die allgemeine Schulpflicht nicht wie bisher nach 10 sondern nach 9 Jahren enden und damit ein erheblicher Teil eines zweiten Absolventenjahrganges Ausbildungsplätze benötigen wird;
- viele Bewerber hinzukommen werden, die 1991 eine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aufgenommen oder ein Berufsvorbereitungs- oder Berufsgrundbildungsjahr besucht haben oder in eine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eingemündet sind;
- mit der Einführung des dualen Systems im Jahr 1990 ein großer Teil der Lehrlinge ihre in der Regel zweijährige Facharbeiterausbildung auf die im allgemeinen dreijährige Ausbildung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umgestellt hat und somit ein Jahr länger die vorhandenen Ausbildungsplätze benötigt.

### **Empfehlung für Maßnahmen**

- Sicherung des Vorrangs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vor der Ausbildung i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 Sicherung umfassender Informationen an alle in der Berufsausbildung Beteiligten über bestehende und ggf. in Vorbereitung befindlich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Berufsausbildung;
- Koordination der Maßnahmen zur Sicherung eines ausreichenden Ausbildungsplatzangebotes zwischen Bund, Bundesanstalt für Arbeit und neuen Ländern;
- Beobachtung der Wirksamkeit der eingeleiteten Maßnahmen und Programme und Einleitung von Initiativen bei ggf. auftretenden Angebotslücken.
- Appell an Wirtschaft und Gebietskörperschaften, das Ausbildungsplatzangebot im Jahr 1992 zu erhöhen und qualitativ zu verbessern.

[...]



## II. Umsetzung der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 sowie weitere Entwicklung der Berufsschulen

### 1. Umsetzung der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

#### Ausgangslage und Probleme

Die Einführung des dualen Systems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bringt auch neue Anforderungen und Probleme bei der Anwendung und Umsetzung der Grundlagen für die Gestaltung der Ausbildung in Betrieben und Berufsschulen mit sich. Sie stellen sich in den einzelnen Berufsfeldern sehr unterschiedlich dar und bestehen vor allem dort, wo sich die Ausbildungsziele, -inhalte und -methoden besonders gravierend geändert haben bzw. wo bisher nur in geringem Umfang ausgebildet worden ist:

- Im gewerblich-technischen Bereich sind vor allem Berufe betroffen, die neu für die Ausbildungspraxis in den neuen Ländern sind bzw. solche, bei denen nur eine grobe inhaltliche Vergleichbarkeit der früheren Facharbeiterausbildung mit de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gegeben ist (z.B. die neugeordneten Metall- und Elektroberufe).
- Besonders schwierig ist die Umsetzung in den kaufmännischen und verwaltenden Berufen, da sich hier durch den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Umbruch ein grundlegender Ziel- und Inhaltswandel vollzogen hat.
- Ähnlich groß sind die Umsetzungsprobleme bei den freien Berufen, für die in dieser Art gar nicht oder nur teilweise in der ehemaligen DDR ausgebildet wurde.

#### Empfehlungen für Maßnahmen

- Unterstütz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durch Wirtschaftsverbände, Innungen und Gewerkschaften sowie durch die Wirtschaft in den alten Ländern (z.B. Ausbildungspartnerschaften);
- Quantitativer und qualitativer Ausbau der Beratungstätigkeit der zuständigen Stellen;
- Flächendeckendes Angebot der Erläuterungen zu den Ausbildungsordnungen durch die Wirtschaft;
- Entwicklung von Umsetzungshilfen zu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n, insbesondere im Berufsfeld Wirtschaft und Verwaltung und bei den freien Berufen;
- Unterstützung der in der Ausbildung noch wenig erfahrene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 durch die zuständigen Stellen;
- Förderung des Ausbaus überbetrieblicher Ausbildungstätten sowie inhaltliche und organisatorische Unterstützung der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tätten und der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 Nutzung von Modellversuchen für die weitere inhaltliche Ausgestaltung der Berufsausbildung.

## 2. Weitere Entwicklung der Berufsschulen

### Ausgangslage und Probleme

Für den schulischen Teil der Facharbeiterausbildung gab es in der ehemaligen DDR zu Beginn des Ausbildungsjahres 1990/91 936 Betriebsberufs- bzw. Betriebsschulen und 239 kommunale Berufsschulen. Diese vergleichsweise hohe Zahl ist zurückzuführen auf enge Anbindung der Berufsausbildung an Betriebe und Kombinate, verbunden mit einem hohen Grad der Spezialisierung der Facharbeiterausbildung. Inzwischen wurde ein erster Schritt zur Bildung leistungsfähiger Berufsschulen getan, indem 50 bis 60% der bisher eigenständigen Berufsschulen in Außenstellen umgewandelt wurden. Mit dem Gesetz über Berufsschulen vom 19. Juli 1990 wurde die Überführung der betrieblichen und kommunalen Berufsschulen auf die neuen Schulträger, Landkreise und kreisfreie Städte, in die Wege geleitet. Dabei haben sich wegen der engen räumlichen und organisatorischen Anbindung der Bildungseinrichtungen an die Betriebe Probleme ergeben mit der Folge, daß insbesondere Praxisbereiche, Kabinette (Fachräume) und Labors nicht einer schnellen Nutzung zugeführt werden konnten. Der bauliche Zustand und die technische Ausstattung der Berufsschulen gewährleistet gegenwärtig oftmals nur den Grundstandard der schulischen Ausbildung. Hinzu kommt, daß noch zu viele kleine Berufsschulen bestehen.

### Empfehlung für Maßnahmen

- Vorrangig Verbesserung der Ausstattung der vorhandenen Berufsschulen unter Berücksichtigung eines mittel- und langfristig angelegten Konzepts zur Schulentwicklungsplanung, das sich nicht auf das Gebiet der jetzigen Schulträger beschränkt;
- Mittelfristig Errichtung leistungsfähiger Berufsschulzentren, Fortführung von Außenstellen nur in Ausnahmefällen;
- Entwicklung geeigneter Finanzierungsmodelle, auch vor dem Hintergrund der Erfahrungen der alten Länder;
- Abstimmung der Planungen für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mit der Planung für Berufsschulzentr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örtlichen Gegebenheiten;
- Berücksichtig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 und Arbeitsmarketingentwicklung, sofern vollzeitschulische berufliche Bildungsgänge in die Planungen der Schulstrukturen aufgenommen werden.

Die Länder sind der Meinung, daß sich auch der Bund an der Finanzierung der Berufsschulen angemessen beteiligen sollte. Der Bund weist hierauf zu seinem Beitrag in Form der verbilligten Abgabe von bundeseigenen Liegenschaften und auf die 5 Mrd. DM Investitionshilfe für die Kommunen in den neuen Ländern hin.

[...]

*Quelle:*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Hrsg.):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Bonn 1993. (= Materialien zur Bildungsplanung und zur Forschungsförderung, Heft 31)

문서 번호 3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2 년 [발췌]

1992 년 5 월

담당자 / 기관: 연방 교육·학술부 장관 라이너 오프레프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2 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연방정부의 교육부장관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기회가 공급되어야만 하며, 신연방주의 경제구조 변화는 직업훈련을 위한 계속교육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 현황 (사업체 내 직업교육 및 청소년의 교육형태)
- 직업교육의 내용적 구성과 구조문제
-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을 구연방주 지역의 직업교육 실태에 맞게 조정하는 일
- 직업 계속교육
- 판매업 부문에서의 자격취득수요
- 신연방주 내 사회 서비스에서 전문 및 지도인력의 계속교육
- 신연방주에서의 사업체 외부 직업교육기관의 지원

출처: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2.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1.

Berufsbildungsbericht 1992. Bad Honnef: K.H. Bock Verlag



**GRUNDLAGEN** *sch.*  
**PERSPEKTIVEN**

**BILDUNG**

**WISSENSCHAFT**

**Berufsbildungsbericht**

**1992**

**31**

*S. 83 ff.*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MBW**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31

# **Berufsbildungsbericht 1992**

Bonn 1992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Gliederung

	Seite
<b>Teil I Berufsbildungspolitische Herausforderung: neue Länder, Europäische Union, Mittel- und Osteuropa</b> .....	1
1. Herausforderungen der beruflichen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	1
1.1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	1
1.1.1 Ausbildungssituation.....	2
1.1.2 Aktivitäten zur Sicherung eines ausreichenden Ausbildungsstellenangebots .....	2
1.1.3 Länderinitiativen .....	3
1.1.4 Förderung durch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3
1.1.5 Schulische Rahmenbedingungen in den neuen Ländern .....	3
1.1.6 Handlungsbedarf.....	4
1.2 Entwickl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	5
<b>2. Herausforderung Europäische Union und Mittel- und Osteuropa</b> .....	6
2.1 Auf dem Weg zur Europäischen Union .....	6
2.2 Hilfen für Mittel- und Osteuropa, einschließlich der Nachfolgestaaten der ehemaligen UdSSR .....	7
<b>3. Ausbildung und Beruf — Wirtschaftliche, gesellschaftliche und berufsbildungspolitische Herausforderungen</b> .....	8
3.1 Anforderungen im Fachkräftebereich.....	8
3.2 Nachfragestruktur nach dualer Berufsausbildung.....	8
3.3 Differenzierung, Konzept einer zukunftsorientierten Berufsbildungspolitik.....	8
3.3.1 Differenzierungsansätze zur Förderung von Leistungsstärkeren .....	9
3.3.2 Differenzierungsansätze zur Qualifizierung Lernschwächerer .....	9
3.4 Frauenförder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	10
<b>4. Nachfrage und Angebot an Ausbildungsplätzen</b> .....	11
4.1 Entwicklung 1991 .....	11
4.1.1 Nachfrage.....	11
4.1.2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12
4.1.3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nd unbesetzte Ausbildungsstellen .....	13
4.2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von Angebot und Nachfrage .....	13
4.2.1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2 .....	13
4.2.2 Ausbildungsplatznachfrage in den kommenden Jahren.....	14
4.2.3 Ausbildungsplatzangebot .....	14
<b>Beschluß der Bundesregierung zum Berufsbildungsbericht 1992 vom 18. März 1992</b>	15
<b>Stellungnahme des Hauptausschusses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vom 6. Februar 1992 zum Entwurf des Berufsbildungsberichts 1992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b> .....	16

# Gliederung

	Seite
<b>Teil II Informationen und Daten zur beruflichen Bildung</b> .....	17
<b>1. Quantitativ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b> .....	17
1.1 Ergänzende Daten zur Ausbildungsstellenbilanz 1991 .....	17
1.1.1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	17
1.1.2 Ausbildungssituation .....	21
1.2 Bestand und Struktur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bis 1990 .....	25
1.2.1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bis 1990 .....	25
1.2.2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	29
1.2.2.1 Berufsbildungsstatistik 1990 .....	29
1.2.2.2 Abiturienten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	33
1.2.3 Die Altersstruktur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36
1.2.4 Vorzeitige Lösung von Ausbildungsverträ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36
1.2.4.1 Vorzeitige Lösung von Ausbildungsverträgen .....	36
1.2.4.2 Befragung Jugendlicher mit Vertragslösungen (Kammerbefragung) .....	39
1.2.5 Prüfungen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41
1.3 Bestand und Struktur der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bis 1990 .....	43
1.3.1 Berufliche Vollzeitschulen: Berufsvorbereitungsjahr, Berufsgrundbildungsjahr, Berufsfachschulen .....	43
1.3.2 Ausbildung im Gesundheitswesen .....	44
1.4 Ausbildungsleistun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	45
1.5 Zur Situation der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sbildungsverhalten von Betrieben/Bildungsverhalten von Jugendlichen) .....	45
1.5.1 Ausbildungsstättenbefragung 1991 .....	45
1.5.2 Verbleib der Ausbildungssuchenden in den neuen Ländern im November 1991 ..	46
1.5.3 Befragung von Schulabsolventen in den neuen Ländern; Ausbildungspläne von Schulabgängern 1992 .....	46
1.6 Vorausschätz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2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	49
<b>2. 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b> .....	52
2.1 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52
2.2 Angebots-Nachfrage-Relation in den neuen Ländern .....	55
<b>3. Berufsausbildung und Erwerbstätigkeit</b> .....	60
3.1 Situation und Perspektiven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aus der Sicht der Betrieb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60
3.2 Absolvente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in Metall-, Elektro- und kaufmännisch- verwaltenden Beruf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63
3.2.1 Berufswechsel in den ersten Berufsjahren .....	64
3.2.2 Arbeitslosigkeit in den ersten Berufsjahren .....	65



3.3	Ausbildung und Übergang in die Erwerbstätigkeit (Teilzeitschülerbefragung 1991 in den alten Bundesländern).....	66
3.4	Facharbeiterausbildung und Berufstätigkeit in der früheren DDR .....	69
3.4.1	Die Bedeutung der Facharbeiterausbildung im Bildungswesen der früheren DDR	70
3.4.2	Struktur der Facharbeiterausbildung.....	70
3.4.3	Aspekte des Berufsverlaufs (Berufliche Mobilität) .....	72
3.4.4	Weiterbildungsaktivitäten und Weiterbildungsbedarf .....	73
3.5	Entwicklung der Meister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in der früheren DDR .....	74
3.6	Geschlechtsspezifische Unterschiede bei der Berufswahl und in der Erwerbstätigkeit .....	76
3.7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sbereiche von Verwaltungsfachangestellten und Beamten des mittleren Dienstes .....	79
3.8	Qualifikations- und Berufsfindungsprobleme von Zuwanderern.....	81
<b>4.</b>	<b>Inhaltliche Gestaltung und Strukturfragen der Berufsbildung.....</b>	<b>82</b>
4.1	Zur Angleichung der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n die Berufsbildungspraxis im alten Bundesgebiet .....	82
4.1.1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82
4.1.2	Aktivitä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Berufsberatung .....	88
4.1.3	Hilf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89
4.1.4	Maßnahmen der neuen Länder .....	90
4.2	Neuordnung von Ausbildungsberufen.....	91
4.2.1	Neuordnung kaufmännisch-verwaltender Ausbildungsberufe .....	92
4.2.2	Überlegungen zur Neuordnung des Tischlerberufs .....	94
4.3	Gestaltung der Berufsbildung.....	95
4.3.1	Teilzeitschülerbefrag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zur Organisation der Ausbildung.....	95
4.3.2	Perspektiven betrieblicher Ausbildungsgestaltung im Handwerk .....	97
4.3.3	Umweltschutz in der beruflichen Bildung .....	98
4.3.4	Dezentrales Lernen .....	99
4.4	Differenzierung in der Ausbildung.....	100
4.4.1	Konzepte zur Förder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	100
4.4.2	Konzepte zur Förderung leistungsstarker und begabter Jugendlicher .....	101
4.5	Sonderausbildungsgänge für Abiturienten in der Wirtschaf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03
4.6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	104
<b>5.</b>	<b>Personengruppen, die besonderer Förderung bedürfen .....</b>	<b>105</b>
5.1	Entwicklung berufsvorbereitender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	105
5.2	Förderung der Berufsbildung Behinderter.....	105
5.2.1	Erstmalige berufliche Eingliederung von Behinderten.....	105

5.2.2	Berufliche Wiedereingliederung von Behinderten .....	106
5.3	Förder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111
5.3.1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von benachteiligten Auszubildenden nach § 40c AFG.....	111
5.3.2	Perspektiven der Förderung (erste Ergebnisse aus BIBB-Forschungsprojekt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von nicht behinderten Jugendlichen, die bisher ohne Berufsausbildung bleiben“).....	112
5.3.3	Jugendlich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die Ausbildung endgültig abgebrochen haben.....	112
5.4	Berufsausbildung ausländischer Jugendlich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114
5.4.1	Daten zur betrieblichen und schulischen Berufsausbildung .....	114
5.4.2	Berufsausbildung ausländischer Jugendlicher im alten Bundesgebiet .....	118
5.4.3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ausländischer Jugendlicher und junger Erwachsener.....	121
<b>6.</b>	<b>Berufliche Weiterbildung .....</b>	<b>122</b>
6.1	Quantitative Entwicklung.....	122
6.1.1	Berichtssystem Weiterbildung.....	122
6.1.2	Entwicklung der AFG-geförderten beruflichen Weiterbildung.....	122
6.1.3	Quantitative Entwicklung der betrieblichen und außerbetrieblichen Umschulung mit Abschluß im alten Bundesgebiet .....	125
6.1.4	Weiterbildungsprüfungsstatistiken.....	127
6.2	Konzertierte Aktion Weiterbildung .....	131
6.2.1	Organisatorische Straffung der Arbeit der KAW .....	131
6.2.2	Themen für die künftige Arbeit der KAW .....	131
6.3	Beispiele geänderter Qualifikationsanforderungen.....	131
6.3.1	Professionalisierung im Umweltschutz .....	132
6.3.2	Qualifikationsentwicklung in der rechnergestützten Konstruktion .....	133
6.4	Entwicklungen von Weiterbildungsangeboten und Prüfungsregelungen .....	134
6.4.1	Berufliche Fortbildung zum Industriemeister — Erfahrungen aus dem Modellversuch „Industriemeister-Oberflächentechnik“ .....	134
6.4.2	Kaufmännische Fortbildung: Evaluierung der Fortbildungsmodelle „Industriefachwirt/in“ und „Fachkraft Rechnungswesen/Finanzierung“ .....	135
6.4.3	Aufstiegsfortbildung im Bereich Technisches Zeichnen/Konstruktion .....	135
6.4.4	Qualifikationsanforderungen für bühnentechnische Meisterberufe.....	136
6.5	Weiterbildungsangebote für bestimmte Zielgruppen.....	136
6.5.1	Weiterbildung für Frauen (Umschulung in technikorientierte Berufe) .....	136
6.5.2	Aufstiegsfortbildung für Frauen.....	137
6.5.3	Qualifizierung von Aussiedlern durch Weiterbildungsmaßnahmen.....	138
6.5.4	Beratung von lernungewohnten Erwachsenen in der Weiterbildung.....	139
6.5.5	Weiterbildung für Langzeitarbeitslose.....	139
6.5.6	Arbeitsplatznahes Lernen un- und angelernter Beschäftigter — Erfahrungen aus Modellvorhaben zur Organisation betrieblicher Weiterbildung für Klein- und Mittelbetriebe .....	140

6.6	Fernunterricht.....	141
6.6.1	Ergebnisse der freiwilligen Fernunterrichtsstatistik.....	141
6.6.2	Anbieter und Angebote im Fernunterricht .....	142
6.6.3	Medien im Fernunterricht .....	142
6.6.4	Beratung und Fernunterricht .....	144
6.6.5	Fernstudium und Fernunterricht in den neuen Ländern.....	144
6.7	Rahmenbedingungen.....	144
6.7.1	Nutzung von Weiterbildungsdatenbanken.....	145
6.7.2	Übersicht über Angebote für kaufmännische Fortbildung.....	147
6.7.3	Markttransparenz im Bereich der Weiterbildung .....	148
6.7.4	Qualitätsstandards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Stand der Qualitätsdiskussion .....	148
6.8	Aspekte der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	150
6.8.1	Ausbildungsabschlüsse von Meistern der volkseigenen Industrie (VE-Meister)...	150
6.8.2	Qualifizierungsbedarf im kaufmännischen Bereich.....	150
6.8.3	Weiterbildung von Fach- und Führungskräften in den sozialen Diensten der neuen Länder.....	151
6.9	Weiterbildungsforschung .....	152
6.9.1	Zum Stand der Weiterbildungsforschung.....	152
6.9.2	Aspekte der Qualifikation und der Qualifizierung in Projekten des Programms „Arbeit und Technik“ .....	153
<b>7.</b>	<b>Personal in der beruflichen Bildung</b> .....	<b>154</b>
7.1	Zahlenmäßige Entwicklung des Ausbildungsperson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54
7.2	Ausbildung der Ausbilder: Überarbeitung des Rahmenstoffplans .....	154
7.3	Weiterbildung von Ausbildern .....	155
7.3.1	Modellvorhaben zur pädagogischen Qualifizierung des Ausbildungspersonals im Handwerk.....	155
7.3.2	Überlegungen zur berufs- und arbeitspädagogischen Weiterbildung der betrieblichen Ausbilder.....	156
7.3.3	Weiterbildung vo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n in den neuen Ländern.....	157
7.4	Qualifizierung des Ausbildungspersonals für den Umweltschutz.....	159
7.5	Ausbildungsberater .....	159
<b>8.</b>	<b>Kosten, Finanzierung und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b> .....	<b>160</b>
8.1	Gesamt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Bildung .....	160
8.1.1	Aufwendungen für die Berufsausbildung.....	160
8.1.2	Aufwendungen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	160
8.2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	161
8.2.1	Individuelle Förderung.....	161
8.2.1.1	Förderung der Auszubildenden i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	161
8.2.1.2	Förderung der Auszubildenden in der schulischen Vollzeitausbildung .....	162

8.2.1.3	Förderung der Teilnehmer an beruflicher Weiterbildung.....	162
8.2.2	Betriebliche Förderung.....	162
8.2.2.1	Bundes- und Rehabilitationsförderung.....	162
8.2.2.2	Länderförderung.....	162
8.2.2.3	Förderung der neuen Länder durch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163
8.2.3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163
8.2.4	Regionalförderung.....	164
8.2.5	Förderung von Modellvorhaben.....	165
8.3	Ausbildungsvergütungen.....	165
8.3.1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65
8.3.2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neuen Ländern.....	166
8.4	Stand der Kostenforschung auf dem Gebiet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167
<b>9.</b>	<b>Internationale Fragen der Berufsausbildung.....</b>	<b>168</b>
9.1	Zusammenarbeit in der EG.....	168
9.1.1	Entsprechungen der beruflichen Befähigungsnachweise.....	169
9.1.2	Anerkennung von beruflichen Befähigungsnachweisen.....	170
9.1.3	Berufsbildung Jugendlicher und ihre Vorbereitung auf das Erwachsenen- und Erwerbsleben — PETRA II.....	170
9.1.4	Förderung von Innovationen i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EUROTECNET).....	171
9.1.5	Aktionsprogramm zur Verbesserung der Fremdsprachenkenntnisse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LINGUA).....	171
9.1.6	Aktionsprogramm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FORCE).....	171
9.1.7	IRIS — Ein europäisches Netzwerk von Ausbildungsprogrammen für Frauen.....	172
9.1.8	Europäischer Sozialfonds (ESF).....	172
9.1.9	Berufsberatung und Europäischer Binnenmarkt.....	174
9.2	Multilaterale Zusammenarbeit in der beruflichen Bildung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174
9.3	Ausgewählte Beispiele bilateraler Zusammenarbeit.....	175
9.3.1	Österreich.....	175
9.3.2	Frankreich.....	176
9.3.3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 und Berufsbildungsforschung mit den Staaten Mittel- und Osteuropas und den Nachfolgestaaten der ehemaligen UdSSR.....	176
9.3.3.1	Ehemalige UdSSR.....	176
9.3.3.2	Ungarn.....	177
9.3.3.3	Polen.....	177
9.3.3.4	Tschechoslowakei.....	177
9.3.4	Israel.....	177
9.3.5	Marokko.....	177
9.3.6	Ägypten.....	177

9.3.7	Volksrepublik China .....	177
9.3.8	Entwicklungsländer.....	178
9.4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	178
9.5	Austausch- und Stipendienprogramme,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	178
<b>10.</b>	<b>Anhang</b> .....	<b>180</b>
10.1	Daten der Berufsbildungsstatistik.....	180
10.2	Vorbereitung des Berufsbildungsberichtes 1992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 a. ....	181
10.3	Tabellenverzeichnis, Tabellen.....	182
10.4	Quellenverzeichnis.....	247
10.4.1	Gesetze, Verordnungen, Richtlinien.....	247
10.4.2	Literaturverzeichnis.....	249
<b>11.</b>	<b>Stichwortverzeichnis</b> .....	<b>252</b>

Dabei muß auch 1992 gelten: Ausbildung für die neuen Länder erfordert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 gegebenenfalls auch mit Ausbildungsphasen in Betrieben der alten Bundesländer im Rahmen von Ausbildungsverbänden mit dem Ziel der Verbesserung der Ausbildungsqualität.

Auch wen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1<sup>1</sup> knapp 130000 Ausbildungsplätze nicht besetzt werden konnten und damit die Nachwuchsprobleme noch gewachsen sind, ist es angesichts der großen Kraftanstrengung für den Neuaufbau der Wirtschaft in

den neuen Ländern bildungspolitisch nicht sinnvoll, den hierfür dringend benötigten Fachkräftenachwuchs durch Förderung von 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durch damit verbundene Abwanderungen einzuschränken. Der Grundsatz der Freizügigkeit in Deutschland bleibt davon unberührt. Die Nachwuchsproblem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fordern nicht kurzfristige, sondern auf Dauer angelegte, tragfähige Lösungen der Nachwuchssicherung. Das ist auch deshalb notwendig, weil nach einer Übergangszeit ähnliche Probleme auch in den neuen Ländern zu erwarten sind.

## Beschluß der Bundesregierung zum Berufsbildungsbericht 1992 vom 18. März 1992

Das Bundeskabinett nimmt den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vorgelegten Berufsbildungsbericht 1992 zur Kenntnis und stellt dazu fest:

1.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war das Jahr 1991 von erfolgreichen Anstrengungen gekennzeichnet, für die Jugendlichen in den neuen Ländern ein ausreichendes Ausbildungsplatzangebot zu schaffen, die Ausnahmesituation des beruflichen Weiterbildungsbedarfs in den neuen Ländern zu bewältigen, die europäische Herausforder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anzunehmen und den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Wandel in den ost- und mitteleuropäischen Staaten durch gezielte Hilfen zu unterstützen.

Die Bundesregierung wird diese Anstrengungen 1992 nachhaltig fortsetzen.

2. In den neuen Ländern konnte 1991 jedem Bewerber und jeder Bewerberin ein Ausbildungsplatzangebot gemacht werden. Dies ist ein großer Erfolg, der durch ein erhebliches und anerkennenswertes Engagement aller Beteiligten erreicht wurde.

3. Infolge neuer Schulpflichtregelungen wird 1992 in den neuen Ländern eine größere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zu bewältigen sein als im Vorjahr. Es ist Ziel der Bundesregierung, daß für alle ausbildungswillige Jugendliche ein Ausbildungsplatzangebot zur Verfügung steht. Dies gilt auch für diejenigen, die ihren Ausbildungsplatz z. B. durch Betriebsstillegungen oder Konkurse verlieren. Zudem ist dafür zu sorgen, daß möglichst viele außerbetriebliche Bildungsmaßnahmen in betriebliche Ausbildungen überführt werden. Duale Ausbildung muß Vorrang haben. Hier ist auch in den neuen Ländern in erster Linie die Wirtschaft gefordert. Im Haushal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ind vorsorglich Mittel eingestellt worden, um nach Ausschöpfung aller betrieblichen Ausbildungsangebote noch bestehende Angebotsdefizite in den neuen Ländern mit außerbetrieblichen Bildungsmaßnahmen ausgleichen zu können.

4. Die Konsolidier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und ihre qualitative Weiterentwicklung ist eine zentrale berufsbildungspolitische Aufgabe in den neuen Ländern, die entscheidend von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und der Ausbildungsbereit-

schaft der Betriebe abhängt. Gebraucht werden mehr betriebliche und weniger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Die Bundesregierung wird mit gezielten Hilfen beim Aufbau eines flächendeckenden Netzes überbetrieblicher Berufsausbildungsstätten zur Unterstützung der Berufsbildung vor allem für Klein- und Mittelbetriebe, bei der Qualifizierung des Personals in der beruflichen Bildung und der Entwicklung praktischer Hilfen bei der Erfüllung neuer Ausbildungserfordernisse diesen notwendigen Anpassungsprozeß beschleunigen.

5. Die Lehrstellensituatio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st 1991 durch die Zunahme des Überhangs an nicht besetzten Lehrstellen gekennzeichnet. Mit knapp 130000 nicht besetzten Lehrstellen haben aber auch die Nachwuchsproblem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or allem im Bereich der gewerblich-technischen Fachkräfte weiter zugenommen.

Die Bundesregierung wird sich in Zusammenarbeit mit der Wirtschaft bemühen, tragfähige Konzepte zur Attraktivitätssteig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vor allem zur begabungsgerechteren Differenzierung der Ausbildung, zur Ausschöpfung von Begabungsreserven bei Jugendlichen, die bisher ohne Berufsausbildung geblieben sind, und zur Gleichwertigkeit beruflicher und allgemeiner Bildung zu entwickeln und umzusetzen. Berufliche Bildung muß vergleichbare Optionen eröffnen wie andere Bildungsbereiche und muß für alle Begabungen der Jugendlichen Anreize bieten.

6. Durch Weiterbildung sind berufliche Qualifikationen der Beschäftigten zu erhalten, zu steigern und für neue Entwicklungen zu öffnen. Dies ist angesichts des gesellschaftlichen, technischen und wirtschaftlichen Wandels und der noch stärkeren Internationalisierung der Wirtschaft von gleicher berufsbildungs- und arbeitsmarktpolitischer Bedeutung wie die qualifizierte Ausbildung des Nachwuchses. Dies gilt vor allem auch für die neuen Länder, deren enormer Weiterbildungsbedarf ein zunehmendes Engagement der Betriebe selbst verlangt.

Hierfür geeignete Rahmenbedingungen zu schaffen, ist Ziel der Bundesregierung.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wird beauftragt, den Ausbildungsstellenmarkt, vor allem in den neuen Ländern, laufend zu beobachten und dem Kabinett spätestens zu Beginn des neuen Ausbildungsjahres zu berichten.

plätze in diesen Berufen. Die wenigen kaufmännisch-verwaltenden Ausbildungsplätze wurden überwiegend mit Frauen besetzt. Diese Ausbildungsstruktur wirkte sich auch im Herbst 1990 auf die Besetzung der Ausbildungsplätze für die neuen Länder aus. Viele gewerbliche Berufe haben in den neuen Ländern wesentlich höhere Frauenanteile 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gl. **Übersicht 18**). Dazu gehören die Industriemechaniker, Energieelektroniker und die Fleischer und Bäcker. Auch bei dem hohen Frauenanteil für die Landwirte wirkte die Ausbildungsstruktur der früheren DDR nach.

Die kaufmännischen und Büroberufe, die praktisch keine Vergleichsberufe in der früheren DDR hatten, wurden in den neuen Ländern fast ausschließlich von jungen Frauen gewählt, während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se Berufe zum Teil nahezu gleichermaßen von jungen Frauen und Männern nachgefragt werden. Entsprechendes gilt für die Berufe Bauzeichner/Bauzeichnerin und Technischer Zeichner/Technische Zeichnerin, die in den neuen Ländern fast ausschließlich von Frauen gewählt werden.

Andererseits haben in den neuen Ländern wenige Frauen Berufe gewählt, die traditionell überwiegend von Männern ausgeübt werden. Hier wird ein Rollenverständnis deutlich, das auch durch die hohe Frauenerwerbstätigkeit in zumeist industriell-gewerblichen Berufen nicht aufgelöst wurde. Zu nennen sind die Berufe

### Übersicht 18: Anteile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in ausgewählten Ausbildungsberufen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1990 in Prozent

Ausbildungsberuf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up>1)</sup>	In den neuen Ländern <sup>2)</sup>
Industriemechaniker Maschinen- und Systemtechnik/Industriemechanikerin Maschinen- und Systemtechnik	2,8	6,9
Industriemechaniker Betriebstechnik/Industriemechanikerin Betriebstechnik	2,4	4,8
Bäcker/Bäckerin	21,6	43,3
Fleischer/Fleischerin	4,4	19,7
Landwirt/Landwirtin	7,9	33,6
Bauzeichner/Bauzeichnerin	65,0	95,5
Technischer Zeichner/Technische Zeichnerin	55,1	93,5
Industriekaufmann/Industriekauffrau	61,9	94,4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65,0	95,1
Kaufmann/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42,6	85,8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1,6	0,2
Tischler/Tischlerin	10,4	3,0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10,7	4,3

<sup>1)</sup> Berechnet auf Grund des Bestandes der Auszubildenden

<sup>2)</sup> Berechnet auf Grund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Angaben einschließlich Berlin (Ost); bei den Ost-Verträgen handelt es sich zum erheblichen Teil um alte DDR-Berufe (30. September 1990), die den Westberufen zugeordnet wurd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1990; Erheb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und des Zentralinstituts für Berufsbildung zum 30. September 1990 in den neuen Ländern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Tischler/Tischlerin und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in denen die Frauenanteile in den neuen Ländern wesentlich niedriger liegen 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gl. **Übersicht 18**).

#### Neue Ausbildungsordnungen

In den industriellen Metall- und Elektroberufen ist die Zahl der Neuabschlüsse im Gegensatz zu den übrigen gewerblichen Berufen angestiegen. Auch die Zahl der in diesen Berufen ausgebildeten jungen Frauen ist mit rund 4% angestiegen. Vor der Neuordnung lagen diese Quoten bei etwa 3%. In den neu geordneten industriellen Elektroberufen haben 8% der Auszubildenden die Verträge wieder gelöst, in den Metallberufen 13%. Beide Werte liegen weit unter dem Durchschnitt in anderen Berufen.

In den neu geordneten handwerklichen Elektroberufen ging die Zahl der Auszubildenden nur geringfügig zurück, in den Metallberufen um gut 5%. Beide Werte liegen deutlich unter dem Durchschnitt des Handwerks von knapp 9%.

Im öffentlichen Dienst hat der neu geordnete Beruf Kommunikationselektroniker/Kommunikationselektronikerin Telekommunikationstechnik stärkere Einbußen zu verzeichnen.

Im Einzelhandel haben 68000 Jugendliche einen Vertrag für den dreijährigen Beruf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das sind nur unwesentlich weniger als im Vorjahr. Die Zahl der Neuabschlüsse für die Verkäufer/Verkäuferinnen ging weiter zurück (von 13400 auf 11700).

Insgesamt war die Zahl der Warenkaufleute im dualen System rückläufig, während die Zahl der Dienstleistungskaufleute (Bank-, Versicherungs-, Reiseverkehrskaufleute u. a.) angestiegen ist. Hier spiegeln sich wirtschaftsstrukturelle Trends wider, die auf eine Stärkung des Dienstleistungssektors hinauslaufen. In den neuen Ländern sind die Dienstleistungsberufe noch unterbesetzt, sie umfassen etwas mehr als 3%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ind dies über 6%.

## 1.2.2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 1.2.2.1 Berufsbildungsstatistik 1990

Die schulische Vorbildung wird in der Berufsbildungsstatistik als der zuletzt erreichte allgemeinbildende Schulabschluß ausgewiesen. Sofern vor Antritt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eine berufsbildende Vollzeitschule besucht wurde, wird diese als zuletzt besuchte Schule angegeben.

Hauptschüler und Realschüler weisen gegenüber dem Vorjahr keine veränderten Anteilswerte unter den Auszubildenden auf. Eine Zunahme ist für die Abiturientenanteile festzustellen (von 13,8% auf 14,2%, vgl. **Übersicht 19**). Wie in den früheren Jahren ist der Anteil der Auszubildenden aus dem schulischen Berufsgrundbildungsjahr rückläufig. Insgesamt zeigt sich, daß die Vorbildungsstruktur der Auszubildenden sich nur noch wenig ändert. Hauptschüler haben Anteile von 35,5%, Realschüler erreichen Werte von 32%. Lediglich die Abiturientenanteile steigen noch etwas, entsprechend der Entwicklung bei den Schulabgängerzahlen.

Die Hauptschüler erreichen im Handwerk die höchsten Auszubildendenanteile. Einschließlich der Abgänger des schulischen Berufsgrundbildungsjahres mit einem Hauptschulabschluß kommen über 60% der Auszubildenden im Handwerk aus der

## Übersicht 19: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m alten Bundesgebiet 1989 und 1990 in Prozent

Ausbildungs- bereich	Auszubildende mit der schulischen Vorbildung <sup>1)</sup>													
	Hauptschule ohne Abschluß		mit Abschluß		Realschul- oder gleichwertiger Abschluß		Hochschul- reife		Schulisches Berufsgrund- bildungs- jahr		Berufs- fachschule		Berufs- vorbereitungs- jahr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Industrie und Handel	0,8	0,6	27,9	28,6	35,3	34,5	19,2	19,6	3,4	3,3	12,9	12,9	0,5	0,5
Handwerk <sup>2)</sup>	5,4	5,7	55,0	54,6	18,6	18,8	5,3	5,9	7,3	6,6	6,9	6,9	1,5	1,5
Landwirtschaft	3,3	3,9	23,8	23,4	25,6	26,0	14,2	15,4	27,7	26,3	4,8	4,5	0,7	0,5
Öffentlicher Dienst	0,0	0,1	10,0	13,5	53,5	55,7	17,1	16,7	11,7	8,5	7,7	4,3	0,1	0,2
Freie Berufe	0,3	0,4	15,0	18,7	58,2	56,1	15,3	13,8	0,6	0,7	10,3	10,1	0,2	0,2
Hauswirt- schaft <sup>3)</sup>	22,1	27,1	37,6	34,4	8,2	6,4	0,8	0,9	7,7	9,1	16,7	16,2	6,9	6,0
Seeschiff- fahrt <sup>2)</sup>	5,0	1,2	36,6	36,6	21,7	33,2	32,7	30,8	3,9	1,2	—	—	—	—
<b>Alle Ausbildungsbereiche</b>	<b>2,5</b>	<b>2,5</b>	<b>35,5</b>	<b>35,5</b>	<b>31,8</b>	<b>31,8</b>	<b>13,8</b>	<b>14,2</b>	<b>5,4</b>	<b>4,9</b>	<b>10,2</b>	<b>10,3</b>	<b>0,8</b>	<b>0,9</b>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Übersicht 29, Seite 36

<sup>1)</sup> Jeder Auszubildende ist nur einmal aufgeführt, wobei er entweder nach dem zuletzt erreichten Schulabschluß oder nach der zuletzt besuchten Schule zugeordnet worden ist. Prozententwertung ohne Einbeziehung der Kategorie „ohne Angabe“; sonstige Schulen auf Hauptschule mit Abschluß und Berufsfachschule aufgeteilt (BH und Hw)

<sup>2)</sup> Berechnet auf Grund von Angaben der Neuabschlüsse

<sup>3)</sup> Hauswirtschaft im städtischen Bereich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Hauptschule. In Industrie und Handel stellen die Realschüler die größte Gruppe, gefolgt von den Abiturienten. Nahezu jeder fünfte Auszubildende dieses Bereichs hat eine Studienberechtigung.

Rund 37 000 Hauptschüler ohne Abschluß erhalten im dualen System eine Berufsausbildung, die meisten im Handwerk. Die Zahl ist entsprechend der Entwicklung bei den Schulabgängerzahlen gegenüber dem Vorjahr zurückgegangen. In der Haus-

wirtschaft sind höhere Anteilswerte zu verzeichnen, vor allem durch eine verstärkte Ausbildung von Behinderten nach § 48 BBiG (vgl. Übersicht 19).

Die Ausbildung von Studienberechtigten ist auf wenige Berufe konzentriert. In den zehn von ihnen am häufigsten gewählten Berufen werden 115 300 Abiturienten ausgebildet (vgl. Übersicht 20), das sind 55% aller Auszubildenden mit Abitur. Die Konzentration hat damit weiter zugenommen. Allerdings sind

## Übersicht 20: Auszubildende mit Hochschulreife nach Rangfolge 1990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9 und 1990<sup>1)</sup>

Ausbildungsberuf	Auszubildende mit Hochschulreife		Anteil an allen Auszubildenden des betreffenden Berufs	
	1989	1990	1989	1990
	Anzahl		Prozent	
Bankkaufmann/Bankkauffrau	31 900	32 700	59,0	59,2
Industriekaufmann/Industriekauffrau	26 400	26 000	41,2	41,0
Kaufmann/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13 600	13 400	27,6	27,6
Versicherungskaufmann/Versicherungskauffrau	8 200	8 300	60,4	60,1
Bürokaufmann/Bürokauffrau (nur Industrie und Handel)	9 000	8 100	16,1	15,5
Fachgehilfe/Fachgehilfin in steuer- und wirtschaftsberatenden Berufen	8 000	7 700	34,8	32,6
Hotelfachmann/Hotelfachfrau	5 500	5 500	26,6	26,6
Speditionskaufmann/Speditionskauffrau	5 000	5 100	40,6	40,0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5 100	4 300	7,3	6,3
Reiseverkehrskaufmann/Reiseverkehrskauffrau	4 000	4 200	64,9	64,8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Übersicht 30, Seite 37

<sup>1)</sup> Hochgerechnete Werte ohne Einbeziehung der Kategorie „ohne Angabe“; für das Handwerk und die Seeschiffahrt Hochrechnung auf Grund der Angaben für die Neuabschlüss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 Übersicht 21: Auszubildende mit Realschul- oder vergleichbarem Abschluß nach Rangfolge 1990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9 und 1990<sup>1)</sup>

Ausbildungsberuf	Auszubildende mit Realschul- oder vergleichbarem Abschluß		Anteil an allen Auszubildenden des betreffenden Berufs	
	1989	1990	1989	1990
	Anzahl		Prozent	
Arztgehilfe/Arztgehilfin	26.500	24.900	62,8	59,2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23.000	21.200	32,9	31,1
Bürokaufmann/Bürokauffrau (nur Industrie und Handel)	22.300	20.300	39,9	38,8
Industriekaufmann/Industriekauffrau	20.000	19.000	31,2	30,1
Zahnarztgehilfe/Zahnarztgehilfin	20.000	18.700	67,3	61,0
Kaufmann/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18.100	16.900	36,7	35,0
Rechtsanwalts- und Notargehilfe/ Rechtsanwalts- und Notargehilfin	16.900	16.400	68,4	68,2
Bankkaufmann/Bankkauffrau	15.700	15.600	29,0	28,3
Elektroinstallateur/Elektroinstallateurin	12.200	11.800	26,4	26,4
Kommunikationselektroniker/Kommunikationselektronikerin (nur öffentlicher Dienst)	9.100	11.300	70,1	69,6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Übersicht 31, Seite 37

<sup>1)</sup> Hochgerechnete Werte ohne Einbeziehung der Kategorie „ohne Angab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die Anteile der Abiturienten in den einzelnen Berufen in der Regel nicht weiter angestiegen. Bei Berufen wie Bankkaufmann/Bankkauffrau, Versicherungskaufmann/Versicherungskauffrau und Reiseverkehrskaufmann/Reiseverkehrskauffrau haben 60% der Auszubildenden die Hochschulreife. Allerdings gibt es geringer besetzte Berufe wie Werbekaufmann/Werbekauffrau, Buchhändler/Buchhändlerin und Luftverkehrskaufmann/Luftverkehrskauffrau, in denen mehr als drei Viertel der Auszubildenden ein Abitur haben.

Bei den Realschülern umfassen die zehn am häufigsten gewählten Berufe 37,5% (Vorjahr 38%) aller Auszubildenden mit diesem Abschluß. Darunter sind auch gewerbliche Berufe wie

Elektroinstallateur/Elektroinstallateurin und Kommunikations-elektroniker/Kommunikationselektronikerin (vgl. Übersicht 21).

In den zehn von Hauptschülern am häufigsten gewählten Berufen haben sich die Anteile dieser Schülergruppe gehalten. Berufe wie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Friseur/Friseurin und Gas- und Wasserinstallateur/Gas- und Wasserinstallateurin wurden wie in den Vorjahren zu über 60% von Hauptschülern und Hauptschülerinnen gewählt. Die Konzentration auf diese Berufe ging mit 41% der Auszubildenden mit Hauptschulabschluß etwas zurück (Vorjahr 42%). Die gewählten Berufe gehören überwiegend dem Handwerk an (vgl. Übersicht 22). In Industrie und Handel gehören Berufe wie

## Übersicht 22: Auszubildende mit Hauptschulabschluß nach Rangfolge 1990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9 und 1990<sup>1)</sup>

Ausbildungsberuf	Auszubildende mit Hauptschulabschluß		Anteil an allen Auszubildenden des betreffenden Berufs	
	1989	1990	1989	1990
	Anzahl		Prozent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42.600	39.200	60,8	61,0
Friseur/Friseurin	37.300	32.900	67,8	67,2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28.000	29.200	40,1	42,7
Elektroinstallateur/Elektroinstallateurin	25.800	24.900	55,8	55,4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18.000	16.000	64,2	63,7
Gas- und Wasserinstallateur/Gas- und Wasserinstallateurin	16.500	15.500	67,7	67,6
Verkäufer/Verkäuferin	18.400	15.200	60,3	62,2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Betriebstechnik	10.900	14.300	47,9	50,2
Bäcker/Bäckerin	15.500	12.700	71,7	71,8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Maschinen- und Systemtechnik	8.900	12.500	44,1	43,8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Übersicht 32, Seite 38

<sup>1)</sup> Hochgerechnete Werte ohne Einbeziehung der Kategorie „ohne Angabe“; für das Handwerk Hochrechnung auf Grund der Angaben für Neuabschlüss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 Übersicht 23: Auszubildende ohne Hauptschulabschluß nach Rangfolge 1990 der zehn am stärksten besetzten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1989 und 1990<sup>1)</sup>

Ausbildungsberuf	Auszubildende ohne Hauptschulabschluß		Anteil an allen Auszubildenden des betreffenden Berufs	
	1989	1990	1989	1990
	Anzahl		Prozent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3 600	3 600	12,9	14,2
Friseur/Friseurin	2 700	2 800	4,9	5,8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2 500	2 700	3,5	4,2
Bäcker/Bäckerin	2 000	1 900	9,3	10,7
Metallbauer/Metallbauerin	2 300	1 800	11,0	9,8
Hauswirtschaftstechnischer Betriebsshelfer/ Hauswirtschaftstechnische Betriebsshelferin <sup>2)</sup>	1 500	1 500	51,8	54,8
Tischler/Tischlerin	1 400	1 500	4,9	4,8
Maurer	1 400	1 400	9,1	8,4
Gas- und Wasserinstallateur/Gas- und Wasserinstallateurin	1 200	1 100	5,0	4,9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900	1 100	11,4	15,4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Übersicht 33, Seite 38

<sup>1)</sup> Hochgerechnete Werte ohne Einbeziehung der Kategorie „ohne Angabe“; für das Handwerk Hochrechnung auf Grund der Angaben für die Neuabschlüsse

<sup>2)</sup> Ausbildungsberuf nach § 48 BBiG; einschließlich Hauswirtschaftlicher Helfer/Hauswirtschaftliche Helferinn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Verkäufer/Verkäuferin und Koch/Köchin und die Metallberufe zu den häufigsten von Hauptschülern und Hauptschülerinnen gewählten Ausbildungsberufen.

Die meisten Auszubildenden ohne Hauptschulabschluß erlernen handwerkliche Berufe wie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oder Friseur/Friseurin. Auch in den Metall- und Bauberufen werden viele von ihnen ausgebildet. Unter den zehn am häufigsten gewählten Berufen ist auch die Hauswirtschaft vertreten. In diesen zehn am stärksten besuchten Berufen befinden sich mehr als die Hälfte aller Auszubildenden ohne Hauptschulabschluß (vgl. Übersicht 23).

Hauptschüler ohne Abschluß werden auch in Berufen nach § 48 BBiG und § 42 b HwO (Regelungen für Ausbildung Behinderter) ausgebildet. Bei den hauswirtschaftlich-technischen Betriebsshelfern haben über 50% die Hauptschule ohne Abschluß verlassen und 14% haben das Berufsvorbereitungsjahr besucht. Bei den Fachwerkern im Bereich Landwirtschaft sind ähnliche Anteilswerte festzustellen. In Industrie und Handel werden rund 2 600 Auszubildende nach § 48 BBiG ausgebildet. Davon haben über 50% den Hauptschulabschluß, 16% kommen von Hauptschulen ohne Abschluß und 9% haben das Berufsvorbereitungsjahr besucht.

### Übersicht 24: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89 und 1990 in Prozent

Bundesland	Auszubildende mit der schulischen Vorbildung <sup>1)</sup>													
	Hauptschule ohne Abschluß		mit Abschluß		Realschul- oder gleichwertiger Abschluß		Hochschulreife		Schulisches Berufsgrundbildungsjahr		Berufsfachschule		Berufsvorbereitungsjahr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Schleswig-Holstein	2,6	2,9	36,0	35,7	33,5	33,4	11,7	11,8	3,2	2,7	10,6	11,2	2,3	2,4
Hamburg	1,4	1,2	23,3	22,9	39,0	37,9	24,6	25,9	1,3	1,2	8,5	8,9	1,8	2,0
Niedersachsen	2,2	2,0	24,3	24,2	26,4	27,5	12,2	13,3	18,6	17,1	15,3	14,5	1,0	1,4
Bremen	2,5	3,5	26,9	28,5	38,3	31,1	18,9	18,9	2,9	2,3	9,6	15,4	0,8	0,2
Nordrhein-Westfalen	2,5	2,5	34,3	35,0	33,0	32,8	17,9	18,1	2,3	1,8	9,2	9,3	0,6	0,6
Hessen	2,3	2,1	29,7	30,5	36,6	37,0	17,1	17,6	4,3	3,3	8,8	8,3	1,3	1,2
Rheinland-Pfalz	3,1	3,0	42,4	41,5	27,3	27,8	10,3	10,7	4,7	4,0	11,4	11,7	0,8	1,4
Baden-Württemberg	1,2	1,3	34,8	35,6	32,8	32,5	11,5	11,6	2,3	2,3	16,8	16,2	0,4	0,5
Bayern	3,4	3,5	47,6	47,3	29,1	28,9	8,2	8,7	6,7	6,1	4,4	4,9	0,6	0,5
Saarland	1,8	1,9	49,5	45,9	18,0	20,4	15,0	15,8	3,1	5,8	10,6	8,6	1,9	1,5
Berlin (West)	6,3	5,9	29,5	27,3	46,4	47,9	16,4	17,4	0,7	0,6	0,6	0,8	0,1	0,1

<sup>1)</sup> Jeder Auszubildende ist nur einmal aufgeführt, wobei er entweder nach dem zuletzt erreichten Schulabschluß oder nach der zuletzt besuchten Schule zugeordnet worden ist. Prozentuierung ohne Einbeziehung der Kategorie „ohne Angabe“; sonstige Schulen auf Hauptschule mit Abschluß und Berufsfachschule aufgeteilt (IH und Hw)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1. Dezember

Regional ist die Vorbildungsstruktur der Auszubildenden bestimmt von länderspezifischen Bedingungen der allgemeinbildenden und berufsbildenden Schulen. In Niedersachsen und Bayern erreichen die Absolventen des Berufsgrundbildungsjahres Auszubildendenanteile von 15% bzw. 6% (vgl. Übersicht 24). Das Berufsvorbereitungsjahr haben in Schleswig-Holstein überdurchschnittlich viele Auszubildende (11%) besucht. In den meisten alten Bundesländern haben zwischen 10% und 20% der Auszubildenden vor Ausbildungsbeginn eine berufsbildende Schule absolviert. In Niedersachsen liegt dieser Anteil bei 33% — hier ist der Besuch einer beruflichen Vollzeitschule für viele Ausbildungsberufe vorgeschrieben. In Berlin (West) ist im Zusammenhang mit dem 10. Pflichtschuljahr der Anteilswert der Absolventen aus beruflichen Vollzeitschulen sehr niedrig.

In den Stadtstaaten Bremen, Hamburg und Berlin sind die Ausbildungsanteile der Hochschulberechtigten überdurchschnittlich hoch. Aber auch in den Flächenstaaten Nordrhein-Westfalen, Hessen und im Saarland haben über 15% der Auszubildenden die Hochschulberechtigung.

In den neuen Ländern ist die Vorbildungsstruktur zum Erhebungszeitpunkt noch vom Schulsystem der früheren DDR geprägt. Die meisten Auszubildenden sind Absolventen der 10. Klasse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vgl. Übersicht 25). Von den 12. Klassen der Erweiterten Oberschule kommen nur wenige Absolventen dieser Klassenstufe besitzen die Hochschulberechtigung. Eine größere Anzahl von Auszubildenden befindet sich noch in „Berufsausbildung mit Abitur“. Zukünftig wird sicher der Anteil der Schulabgänger steigen, die mit Hochschulberechtigung eine Ausbildung aufnehmen. Abgänger niedriger Klassen und der Sonderschulen haben vergleichbare Anteile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m 2%, vgl. Übersicht 25).

### 1.2.2.2 Abiturienten<sup>1)</sup> in der beruflichen Ausbildung

Seit 1986 gibt es ein wachsendes Interesse an einem Studium bei Studienberechtigte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Das Statistische Bundesamt ermittelt einen Anstieg von 10 Prozentpunkten zwischen 1986 (59,1%) und 1991 (68,8%). Damit ist wiederum eine Studierneigung erreicht, wie sie Ende der 70er Jahre typisch war. Die Hochschulrektorenkonferenz hat jüngst steigende Studierneigung sowie verspäteter Studienbeginn nach einer nicht-akademischen Berufsausbildung als Ursachen für die Rekordmarke von 1,75 Millionen Studierenden an den Hochschulen in Deutschland genannt.

Bis zur deutschen Einheit war der Hochschulzugang in der früheren DDR staatlich reguliert worden. Bei jetzt freier Ausbildungsentscheidung stellt die Abiturientenbefragung 1991 folgendes Studieninteresse in den neuen Ländern fest:

50,3% (Frauen: 46,4%, Männer: 54,6%) bezeichnen sich als „Studierwillige“. Jeder fünfte männliche und jeder vierte weibliche Abiturient will auf ein Studium verzichten. Knapp 30% der Abiturienten waren sich kurz vor Schulabgang 1991 ihrer Studienabsicht nicht sicher — im Westen Deutschlands waren das rund 20%.

<sup>1)</sup> Die Begriffe „Abiturienten“ und „Studienberechtigte“ werden hier synonym gebraucht. Studienberechtigte besitzen die allgemeine bzw. fachgebundene Hochschulreife oder die Fachhochschulreife. In den neuen Ländern war bisher nur das Erlangen der allgemeinen bzw. der fachgebundenen Hochschulreife möglich. Die fachgebundene Reife wurde vor allem mit dem Studium an Fach- und Ingenieurschulen erreicht.

**Übersicht 25: Schulische Vorbildung der Auszubildenden in den neuen Ländern 1990**

Land		Auszubildende Insgesamt	Davon mit schulischer Vorbildung				
			Absolventen 12. Klasse	Absolventen 10. Klasse	Darunter befinden sich in Berufsausbildung mit Abitur <sup>1)</sup>	Abgänger der 8. Klasse	Abgänger niedriger Klassen und der Sonder- schulen
Brandenburg	Anzahl	39 122	221	33 072	3 761	5 038	791
	Prozent	100	0,6	84,5	9,6	12,9	2,0
Mecklenburg-Vorpommern	Anzahl	33 151	435	27 430	2 608	4 637	649
	Prozent	100	1,3	82,7	7,9	14,0	2,0
Sachsen	Anzahl	75 681	581	65 190	6 624	8 682	1 228
	Prozent	100	0,8	86,1	8,7	11,5	1,6
Sachsen-Anhalt	Anzahl	46 250	403	38 536	3 988	6 243	1 068
	Prozent	100	0,9	83,3	8,6	13,5	2,3
Thüringen	Anzahl	43 910	341	37 551	3 528	5 226	792
	Prozent	100	0,7	85,5	8,0	11,9	1,8
Insgesamt	Anzahl	255 539	2 087	216 885	21 954	31 958	4 609
	Prozent	100	0,8	84,9	8,6	12,5	1,8

<sup>1)</sup> Prozentuiert auf die Angabe Insgesamt

Quelle: Gemeinsames Statistisches Amt der Länder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Statistik der Beruflichen Schulen, Stand 31. Oktober 1990

### Übersicht 38: Gesamtschülerzahl an Schulen des Gesundheitswesens in den neuen Ländern 1989<sup>1)</sup>

Ausbildungsberuf	1. Ausbildungs-jahr	2. Ausbildungs-jahr	3. Ausbildungs-jahr
Krankenschwester/ Krankenpfleger	4 377	4 185	4 651
Kinderkrankenschwester/ Kinderkrankenpfleger	765	796	890
Hebammen/Entbindungspfleger	107	165	145
Beschäftigungs- und Arbeitstherapeutin/ Beschäftigungs- und Arbeitstherapeut	82	21	78
Orthoptistin/Orthoptist	12	14	-
Diätassistentin/Diätassistent	112	74	95
Krankengymnastin/ Krankengymnast	565	637	654
Medizinisch-technische Laboratoriumsassistentin/ Medizinisch-technischer Laboratoriumsassistent	569	586	523
Medizinisch-technische Radiologieassistentin/ Medizinisch-technischer Radiologieassistent	338	257	300
Zahnarthelferin/ Zahnarthelfer	675	702	769
Zahntechnikerin/Zahntechniker	498	519	517

1) Aktuellere Daten liegen nicht vor

Quelle: Fachschulfachstatistik 1989

Schüler, die nach dem 3. Oktober 1990 eine Ausbildung nach den Regelungen für Physiotherapeuten abschließen, erhalten die Berufsbezeichnung nach dem Masseur- und Krankengymnastengesetz. Die Ausbildung zum veterinärmedizinisch-technischen Assistenten, den es in der früheren DDR in dieser Form nicht gab, ist am 3. Oktober 1990 mit dem MTA-G sofort in Kraft getreten.

Mit Inkrafttreten des BBiG in den neuen Ländern wurde die Ausbildung zur Stomatologischen Schwester schrittweise auf das duale System (Zahnarthelferin) umgestellt, die berufstheoretische Ausbildung wird weiterhin von den Medizinischen Fachschulen wahrgenommen, die fachpraktische Ausbildung verlagert sich zunehmend in zahnärztliche Praxen.

In entsprechender Weise wurde auch die Ausbildung zum Zahntechniker in das duale Ausbildungssystem überführt. Hierbei traten Probleme bei der fachpraktischen Ausbildung auf, da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Zahntechnikermeister) fehlten. Um die laufende fachpraktische Ausbildung abzusichern, stehen Fördermittel zur Verfügung. Danach können aus Mittel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is zu 6000 DM pro Ausbildungsplatz und Jahr für die Abgeltung laufender Kosten gezahlt werden.

Mit der Ausbildung in den Berufen  
Logopädin/Logopäde,  
Rettungsassistentin/Rettungsassistent und  
Arzthelferin/Arzthelfer  
wurde 1991 begonnen.

### 1.4 Ausbildungsleistun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Am 30. Juni 1990 (letzte amtliche Zahl) befanden sich im alten Bundesgebiet 258 400 Personen in einer Ausbildung des öffentlichen Dienstes (Bund, Länder und Gemeinden), das sind 1,4% weniger als zwölf Monate zuvor; 112 300 davon befanden sich in Beamtenausbildungen (+2,7%), 95 600 in einer Ausbildung für Verwaltungs- und Büroberufe (-1,8%) sowie 50 500 in gewerblich-technischen Ausbildungsgängen (-8,8%). Der Gesamtbestand an Auszubildenden entspricht einer Ausbildungsquote von 5,5% (Vorjahr 5,7%) aller Beschäftigten bzw. von 6,8% (Vorjahr 6,9%) aller Vollzeitbeschäftigt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Im Bereich der Landesbehör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wurden am 30. Juni 1990 113 000 Personen ausgebildet; bezogen auf das vollzeitbeschäftigte Landespersonal haben die Länderbehörden wie im Vorjahr eine Ausbildungsquote von 7,4%.

Die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haben am Stichtag 30. Juni 1990 69 000 Personen ausgebildet. Das entspricht — bezogen auf das vollzeitbeschäftigte Gemeindepersonal — einer Ausbildungsquote von 6,9% (Vorjahr 7,2%).

Für die neuen Länder liegen vergleichbare Zahlen nicht vor.

1991 sind in den neuen Ländern in Bundesbehörden (einschließlich Bahn und Post) über 10 000 Ausbildungsplätze angeboten worden. Diese Plätze konnten jedoch teilweise wegen fehlender Nachfrage nicht vollständig besetzt werden. So hat zum Beispiel die Deutsche Reichsbahn von 4 239 angebotenen Plätzen lediglich 3 134 besetzen können. Insbesondere in den Ausbildungsberufen Industriemechaniker/in, Energieelektroniker/in, Tiefbau-facharbeiter/Gleisbauer, Kaufmann/Kauffrau im Eisenbahn- und Straßenverkehr war die Nachfrage geringer als das Angebot. Nach einer Umfrage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sind bis zum Stichtag 15. Oktober 1991 in den neuen Ländern 9 027 Jugendliche in Ausbildungsplätze der Bundesverwaltung (einschließlich Beamtenausbildung) eingemündet. Weitere Einstellungen waren geplant.

Erfreulicherweise haben auch die neuen Länder im Herbst 1991 mit der Ausbildung von Verwaltungsnachwuchs begonnen. Verlässliche Zahlen liegen zur Zeit nicht vor.

### 1.5 Zur Situation der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sbildungsverhalten von Betrieben/Bildungsverhalten von Jugendlichen)

#### 1.5.1 Ausbildungsstättenbefragung 1991

Zur Befragungsmethode

Im April 1991 fand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ine schriftliche Befragung bei rund 4 600 Ausbildungsstätten sowie den ehemaligen Trägerbetrieben von Betriebs- und Betriebsberufs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statt. Geantwortet haben rund 2 440 Einrichtungen (53%). Antworten von ehemaligen Betriebsberufsschulen, die zum Zeitpunkt der Befragung bereits in kommunale Trägerschaft übergegangen waren, wurden von der Analyse ausgeschlossen. Wenn Berufsschulen gemeinsam mit den ehemaligen Trägerbetrieben den Fragebogen ausgefüllt bzw. diesen an den Trägerbetrieb weitergeleitet hatten, wurden diese Antworten hingegen mit einbezogen.

Um der Frage nachzugehen, was aus den Berufsbildungsstätten geworden ist, wurden sie gebeten, für den Monat September 1989 und den Monat April 1991 anzugeben, auf welchen Feldern sie aktiv waren. Praktische Lehrlingsausbildung zu beiden Zeiten betrieben 75 % der befragten Berufsbildungsstätten, 14 % hatten weder 1989 noch 1991 praktisch ausgebildet und rund 10 % hatten zwischenzeitlich die praktische Berufsausbildung aufgegeben. Bei der hohen Konzentration der Ausbildung auf wenige Berufsbildungsstätten in der früheren DDR (75 % der Lehrlinge wurden in wenig mehr als 1000 Berufsbildungsstätten ausgebildet) muß diese vergleichsweise kleine Zahl von Stätten (10 %) jedoch nicht bedeuten, daß hiervon nur 10 % der Lehrlinge betroffen sind. Eine Kontrollrechnung ergab allerdings, daß sich nicht die größten Berufsbildungsstätten von der praktischen Ausbildung zurückgezogen hatten; die Stätten, die zwar 1989 praktische Lehrlingsausbildung als eines ihrer Tätigkeitsfelder angekreuzt hatten, nicht aber 1991, bildeten 1989 nur 13 % aller Lehrlinge aus.

60 % der Berufsbildungsstätten, die für 1989 theoretische Ausbildung angegeben hatten, taten dies auch im April 1991 noch. Immerhin knapp 30 % der Berufsbildungsstätten, die für 1989 polytechnischen Unterricht gemeldet hatten, erteilten diesen auch noch 1991. Bei der Bewertung dieser Ergebnisse sind allerdings die Schwierigkeiten bei Selbsteinschätzungen im Rahmen schriftlicher Befragungen zu berücksichtigen.

Relativ niedrig fällt in der Befragung der Anteil der Berufsbildungsstätten aus, die im Frühjahr 1991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nach dem AFG durchführten: 11 % kreuzten diese Kategorie an. Es ist allerdings zu vermuten, daß auch ein Teil der Berufsbildungsstätten, die 1991 angaben, im Bereich der Weiterbildung aktiv zu sein (13 %), Maßnahmen durchführten, die über das AFG finanziert werden können. Im übrigen ist die Zahl der AFG-geförderte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im weiteren Verlauf des Jahres 1991 erheblich gestiegen, so daß die Ergebnisse eher als Momentaufnahme zu werten sind.

Ebenfalls niedrig fällt der Anteil der Lehrlinge aus, deren Ausbildung laut Befragung im April 1991 vom Arbeitsamt oder anderen öffentlichen Stellen finanziert wurde. Bezogen auf die 1990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waren dies 12 %. Gefragt wurde auch nach den geplanten Neueinstellungen von Auszubildenden und der voraussichtlichen Finanzierung der neu begründeten Ausbildungsverhältnisse. Insbesondere die größeren Ausbildungsstätten gingen davon aus, daß knapp die Hälfte dieser Ausbildungsverhältnisse fremd-(AFG)finanziert würden — eine Erwartung, die sich so offenbar nicht erfüllen ließ.

### 1.5.2 Verbleib der Ausbildungssuchenden in den neuen Ländern im November 1991

Das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AB) hat im Mai 1991 eine repräsentative Befragung bei rund 2000 Jugendlichen im Alter von 16 bis unter 20 Jahren aus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 (Ost) über deren Ausbildungsabsichten durchgeführt. Danach wollten 17 % dieser Altersgruppe (hochgerechnet 130000) im Jahre 1991 eine Lehrausbildung beginnen.

Dieser Personenkreis wurde in einer Wiederholungsbefragung im November 1991 nach dem derzeitigen Verbleib gefragt. 80 % dieser Jugendlichen waren bis zum Befragungszeitpunkt in eine

### Übersicht 39: Verbleib der Ausbildungsstellensuchenden in den neuen Ländern im November 1991 in Prozent

Verbleib	Ausbildungsstellensuchende 1991		
	Insgesamt	Frauen	Männer
Lehre	80	76	85
Schule	7	12	2
Studium	1	2	1
Erwerbstätigkeit	—	—	—
Arbeitslosigkeit	6	9	4
Wehrpflicht	2	—	4
Sonstiges	4	1	4
<b>Zusammen</b>	<b>100</b>	<b>100</b>	<b>100</b>

Quelle: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Sozialforschung; IAB-Kurzbericht Nr. 5 vom 19. Februar 1992

Lehrausbildung eingemündet, darunter knapp ein Fünftel in eine Lehrstelle im Westen (vgl. Übersicht 39).

Von den übrigen ist die Mehrzahl (7 %) in einen schulischen Ausbildungsgang (allgemein- oder berufsbildend) eingemündet oder sind arbeitslos geblieben (6 %).

Junge Frauen sind in geringerem Umfang in Lehrstellen und häufiger in schulische Ausbildungsgänge eingemündet. Wie bereits aus der Mai-Befragung erkennbar war, gestaltete sich die Stellensuche für die Mädchen schwieriger als für die Jungen: sie haben sich häufiger beworben, aber auch mehr Absagen bekommen als ihre männlichen Mitbewerber. Allerdings haben sie auch etwas häufiger von sich aus Stellenangebote abgelehnt: Im Durchschnitt hat etwa jeder dritte Jugendliche ein oder mehrere Stellenangebote abgelehnt — mehrheitlich solche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oder dem Westteil Berlins; von den jungen Frauen 40 %, von den jungen Männern 30 %.

Hauptgründe für die Ablehnung von Ausbildungsplatzangeboten waren die weite Entfernung des Betriebes vom Wohnort (50 %), der „falsche Beruf“ (39 %) und die Unsicherheit, ob der Betrieb weiterbestehen würde (19 %).

Trotz schwieriger Ausbildungsstellensuche haben die meisten der in eine Lehrstelle eingemündeten Jugendlichen den Ausbildungsberuf ihrer Wahl ergreifen können (56 %; für weitere 33 % entspricht die Berufswahl zumindest teilweise dem anfänglichen Berufswunsch). Ebenfalls knapp 60 % sind mit der derzeitigen Stelle zufrieden. Nur rund 7 % betrachten ihre gegenwärtige Einmündung als eine „Notlösung“.

Von den „abgewiesenen“ Bewerbern wollen sich 1992 etwa 40 % erneut um eine Lehrstelle bemühen. Die übrigen streben (zunächst) keine bzw. eine andere Berufsausbildung an (z. B. Verbleib auf weiterführender Schule, Studium oder Fortbildung/ Umschulung, Beendigung des Wehr-/Zivildienstes).

### 1.5.3 Befragung von Schulabsolventen in den neuen Ländern; Ausbildungspläne von Schulabgängern 1992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at im Herbst 1991 in den neuen Ländern eine repräsentative Schülerbefragung durchgeführt. Schüler der Klassen 9 und 10, die den früheren POS-Klassen entsprechen, Schüler der Klasse 12 (früher EOS) und die Schüler i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sollten Auskunft über ihren geplanten weiteren Werdegang geben. An der Erhebung haben 7100 Schüler aus den Bundes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mit folgender Zusammensetzung teilgenommen:

	Männlich Prozent	Weiblich
630 Schüler in der Klasse 9	52	48
2490 Schüler in der Klasse 10	49	51
2430 Schüler in der Klasse 12	42	58
780 Schüler im Berufsvorbereitungsjahr	70	30
740 Schüler im Berufsgrundbildungsjahr	38	62

23 % der Schüler waren 18 Jahre und älter, 48 % 16 und 17 Jahre und 29 % 14 und 15 Jahre alt.

#### Bildungsverhalten von Schülern in der Klasse 9

Das Land Brandenburg hat die zehnjährige Schulpflicht beibehalten. Entsprechend gibt es so gut wie keine Schulabgänger bzw. Ausbildungsplatznachfrager aus der Klasse 9.

Sachsen wird eine Differenzierung der Klasse 9 — Schulabgangsklasse der Hauptschule oder Klasse 9 der Realschule — erst im Schuljahr 1992/93 realisieren. Die Schulleiter gehen davon aus, daß 1992 eine deutliche Mehrheit der Schüler aus der Klasse 9 in die Klasse 10 überwechseln wird. Die Angaben der Schüler bestätigen dies. Nur etwa 22 % wollen 1992 eine Lehre beginnen.

In Sachsen-Anhalt und Mecklenburg-Vorpommern gibt es nach der Klasse 8 eine relativ strikte Trennung zwischen der Klasse 9 der Hauptschule und der Klasse 9 der Realschule. Der Wechsel von der Klasse 9 der Hauptschule in die Klasse 10 ist die Ausnahme. Die Schülerangaben aus dem Hauptschulbereich der Klasse 9 ergaben im Durchschnitt eine Übergangsquote in die Lehre von rund 75 %. Von den übrigen Schülern der Klasse 9 (Realschule oder Gymnasium) wollten wegen des angestrebten mittleren oder höheren schulischen Abschlusses nur wenige, etwa 10 %, direkt ein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beginnen.

Das Land Thüringen unterscheidet in den Regelschulen Haupt- und Realschulklassen. Die Schüler werden aber in einigen Fächern noch gemeinsam unterrichtet. Am Ende der Klasse 9/ Hauptschule kann hier noch relativ leicht in die Klasse 10 gewechselt werden. Die durchschnittlichen Übergangsquoten

der Hauptschüler aus Klasse 9 in das duale System sind deshalb mit unter 60 % deutlich niedriger als die entsprechenden Quoten in Sachsen-Anhalt und Mecklenburg-Vorpommern. Die Übergänge der Realschüler aus Klasse 9 in die Lehre erreichen auch hier eine Quote von höchstens 10 %.

Die Angaben der vier Bundesländer werden mit ihren Anteilen am Schüler-Jahrgang (Sachsen 40 %, Sachsen-Anhalt 25 %, Thüringen 20 % und Mecklenburg-Vorpommern 15 %) gewichtet. Berücksichtigt man diese Gewichte sowie das jeweilige Verhältnis der Klassen 9/ Hauptschule zu den Klassen 9/Realschule, dann erhält man für den angestrebten Übergang in di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einen Anteil von 25 % bis 30 % (im Durchschnitt 27 %). Weitere 6 % bis 8 % der Schüler in Klasse 9 planen den Besuch einer beruflichen Vollzeitschule oder waren noch unentschlossen. Die übrigen (64 % bis 67 %) nannten als Ziel die Fortführung der allgemeinen Schulbildung.

#### Ausbildungswege der Abgänger aus den Klassen 10 und 12 sowie aus beruflichen Vollzeitschulen

Das geplante Bildungsverhalten der Schüler in den Klassen 10, 12 und in de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im wesentlichen dem Berufsvorbereitungs- und Berufsgrundbildungsjahr, unterscheidet sich nur graduell von dem der Schül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56ff). Das gilt nicht nur für das Interesse an der Lehre und für die Studienbereitschaft. Es gilt zum Teil auch für schulische und andere vergleichbare Ausbildungsgänge sowie für Unterschiede im geschlechtsspezifischen Bildungsverhalten.

Bereitschaft, eine Lehre zu absolvieren, äußerten knapp 70 % der Realschüler, 25 % der Abiturienten und 77 % der Schüler i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vgl. Übersicht 40). Der Übergang von Realschülern in die gymnasiale Oberstufe (16 %) wird durch die Einführung eines Probehalbjahres in der Klasse 11 beeinflusst. Nicht alle werden diese Probezeit bestehen und sich dann wohl mehrheitlich für die Lehre entscheiden. Präferenzen für schulische oder für vergleichbare Ausbildungsgänge äußerten je 10 % der Realschüler bzw. Abiturienten, 7 % der Schüler im Berufsvorbereitungs- und 17 % der Schüler im Berufsgrundbildungsjahr. Die große Differenz zwischen den BVJ- und BGJ-Prozentanteilen hängt auch von der geschlechtsspezifischen

### Übersicht 40: Der geplante berufliche Werdegang der Schüler in den Klassen 10, 12 und i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in Prozent

	Klasse 10	Klasse 12	Berufs- vorbereitungsjahr	Berufs- grundbildungsjahr und anderes
Lehre	69	25	79	75
Allgemeinbildende Schule	16	—	.	.
Studium	—	39	.	.
BVJ/BGJ	3	2	4	.
Schulische/andere Ausbildung	7	8	3	17
Wehr-/Zivildienst	—	14	.	.
Arbeit	.	1	3	.
Noch unentschlossen	5	11	11	5
<b>Insgesamt</b>	<b>100</b>	<b>100</b>	<b>100</b>	<b>100</b>

. = Fallzahlen zu gering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Zusammensetzung der Schüler ab: Im Berufsvorbereitungsjahr dominieren die Jungen, im Berufsgrundbildungsjahr die Mädchen.

Abweichungen im Bildungsverhalten in den fünf neuen Ländern sind kaum ersichtlich. Geschlechtsspezifische Unterschiede entsprechen der Struktur, die von den alten Bundesländern her vertraut ist: Das Interesse am Fortgang der schulischen Bildung ist bei Mädchen und Jungen gleich. Signifikant mehr männliche als weibliche Schüler wollen eine Lehre machen. Beim Studienbeginn unmittelbar nach Schulende und bei den schulischen (oder anderen) Ausbildungsgängen ist es umgekehrt. Mehr Mädchen als Jungen waren zum Befragungszeitpunkt noch unentschlossen.

#### Informationsdefizite der Schüler im Vergleich zum Vorjahr

Die Schüler waren über die neuen Ausbildungsberufe und die schulischen Qualifizierungsmöglichkeiten erheblich besser informiert als noch im Vorjahr (vgl. **Übersicht 41**).

Während sich 1990 höchstens jeder zehnte Schüler ausreichend über das Spektrum der betrieblichen Berufe informiert fühlte,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56), sind es nunmehr im Durchschnitt 50%.

Von den Jugendlichen, die 1992 gerne eine Lehre machen wollen, fühlten sich sogar 60% gut bis ausreichend über das duale System informiert. Bei den Schülern, die sich erfolgreich um eine Lehrstelle beworben hatten, lag diese Quote bei 71%. Ähnlich hohe Werte gab es für die Lehre-Aspiranten des Berufsvorbereitungs- und Berufsgrundbildungsjahrs.

#### Berufswahlverhalten

88% der befragten Schüler, die den ersten Schritt in das Berufsleben mit einer Lehre machen wollten, hatten sich zum Befragungszeitpunkt zumindest schon für ein Berufsfeld entschieden (vgl. **Übersichten 42 bis 44**).

Die berufliche Gliederung der Ausbildungswünsche von Schülern der neuen Länder unterscheidet sich zum Teil erheblich von der entsprechenden Struktu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57 ff). Die Gründe dafür liegen vor allem in der noch deutlich abweichenden Wirtschaftsstruktur.

### Übersicht 41: Informiertheit von Schülern in den neuen Ländern hinsichtlich der betrieblichen und schulischen Ausbildungsmöglichkeiten in Prozent

Schuljahr	Gut/ ausreichend informiert fühlten sich	Nicht ausreichend informiert fühlten sich
Klasse 9	39	61
Klasse 10	55	45
Klasse 12	35	65
Berufsvorbereitungsjahr	71	29
Berufsgrundbildungsjahr	62	38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ine Ausnahme sind die Friseur-, Arzt-, Zahnarzt-, Apothekenhelfer- sowie die hauswirtschaftlichen Berufe, deren Anziehungskraft auf ostdeutsche Schüler (11% der Nennungen) im wesentlichen dem Interesse entspricht, das auch von Schulabgängern der alten Bundesländer gezeigt wird (14%).

Die Metall- und Elektroberufe sind hier wie dort ein Betätigungsfeld für Haupt- und Realschüler sowie für Schüler beruflicher Schulen. Doch anders als im Westen, wo diese Berufsfelder von 20% bis 25% der genannten Schulabgängergruppen gewählt werden, liegt ihr Anteil in den neuen Ländern bei 15%. Hier kann der anhaltende Beschäftigungsabbau in der Industrie eine Rolle spielen.

Ein umgekehrtes Ergebnis gibt es bei den Bauberufen (einschließlich Maler/Lackierer, Tischler, Gas- und Wasserinstallateur). Bedingt durch den Aufschwung in der Bauwirtschaft ist die Wahl dieser Berufe mit rund 20% fast doppelt so häufig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Ähnliche Unterschiede gibt es in den Ernährungsberufen, wie Bäcker, Konditor, Fleischer, Koch, gastgewerbliche Berufe (10% im Osten, 4% im Westen).

Die kaufmännischen Berufe sind in den neuen Ländern stärker als in den alten zu einem Ausbildungsschwerpunkt für Abiturienten geworden. Während ungefähr 20% der Realschüler und der Schüler im Berufsgrundbildungsjah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rund 30%) sich für das kaufmännische Berufsfeld entschieden hatten, waren es bei den Abiturienten 65% (in den alten Bundesländern 52%).

### Übersicht 42: Wahl der Berufsgruppe in Abhängigkeit von Schulklasse und Schulform in den neuen Ländern in Prozent

Berufsgruppe	Klasse 9	Klasse 10	Klasse 12	BVJ	BGJ
Spaltensumme 100 Prozent					
Landwirtschaft/Gartenbau	.	3	.	.	.
Metall-/Elektroberufe	16	19	.	12	15
Bau- und verwandte Berufe	20	17	.	48	19
Ernährungsberufe	.	11	6	10	12
Kaufleute	14	19	64	.	22
Friseur/Helfer/Hauswirtschaft	16	10	.	9	10
Sonstige Berufe	.	8	7	.	10
Entscheidung noch nicht gefallen	16	12	14	10	8

. = Fallzahlen zu gering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Übersicht 43: Häufigkeit der Berufsnennungen in Abhängigkeit vom Geschlecht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sup>1)</sup> in Prozent**

Berufsgruppe	Männlich		Weiblich	
	Neue Länder	Alte Bundesländer	Neue Länder	Alte Bundesländer
	Spaltensumme 100 Prozent			
Landwirtschaft/Gartenbau	.	5	6	5
Metall-/Elektroberufe	27	37	.	2
Bau- und verwandte Berufe	38	18	.	2
Ernährungsberufe	6	4	14	5
Kaufleute	13	17	36	36
Friseur/Helfer/Hauswirtschaft	.	5	18	24
Sonstige Berufe	4	7	11	13
Entscheidung noch nicht gefallen	10	7	13	13

. = Fallzahlen zu gering

<sup>1)</sup> Die Vergleichszahle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stammen aus einer 1990 durchgeführten Erhebung;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58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werb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en an einer Lehre interessierten Schülern wurde die Frage gestellt, ob sie sich auch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ewerben würden, wenn sie in ihrer Umgebung keinen Ausbildungsplatz fänden. Die Antworten zeigten, daß das Mobilitätspotential sehr hoch ist.

Die Reaktionen aus der Klasse 9 aus dem Berufsvorbereitungs- und Berufsgrundbildungsjahr waren sehr ähnlich: Ungefähr 54 % sagten ja zur Bewerb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6 % nein und 30 % meinten, sie wüßten es noch nicht. Dagegen waren bei den Realschulabsolventen der Klasse 10 65 % und bei den Abiturienten sogar 75 % dazu bereit. Nein sagten nur 7 % bzw. 8 %, und unentschlossen waren 27 % bzw. 18 %.

**Übersicht 44: Bewerbungserfolg in Abhängigkeit vom gewählten Beruf in den neuen Ländern in Prozent**

Berufsgruppe	Bewerbung in Betrieben		
	Mit Erfolg/ mit Aussicht auf Erfolg	Ohne Erfolg	Noch nicht entschieden
	Zeilensumme 100 Prozent		
Landwirtschaft/Gartenbau	.	.	59
Metall-/Elektroberufe	35	10	55
Bau- und verwandte Berufe	34	13	53
Ernährungsberufe	31	16	53
Kaufleute	50	15	35
Friseur/Helfer/Hauswirtschaft	35	11	54
Sonstige Berufe	42	.	51

. = Fallzahlen zu gering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Aufnahme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nach 1992*

Die Frage nach dem eventuellen, späteren Lehrbeginn erlaubt es, die unmittelbare Übergangsquote ins duale System (vgl. **Übersicht 40**) um eine weitere Komponente zu ergänzen.

Viele der befragten Jugendlichen, die 1992 keinen Ausbildungsvertrag abschließen (können), ziehen einen späteren Lehrbeginn in Betracht.

Ergänzt man die Direkteinsteiger mit Abitur ins duale System (25 %; vgl. **Übersicht 40**) um die nach einer Zwischenphase an einer dualen Ausbildung interessierten Abiturienten, dann erhält man die Gesamtübergangsquote (direkte und indirekte Übergangsquote) in Höhe von 32 %. Entsprechende Überlegungen, auf die Absolventen der Klasse 10 angewendet, ergeben auch hier eine Gesamtübergangsquote von über 80 % (statt der direkten von 69 %).

**1.6 Vorausschätz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2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Alte Bundesländer*

Die Nachfrage nach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besteht aus fünf Komponenten:

- der Nachfrage von Schulabgängern aus der Sekundarstufe I (mit und ohne Hauptschulabschluß sowie mit Realschul- oder gleichwertigem Abschluß);
- der Nachfrage von Schulabgängern mit Fachhoch- und Hochschulreife;
- der Nachfrage von Schulabgängern aus dem Berufsvorbereitungs- und Berufsgrundbildungsjahr;
- der Nachfrage von Berufsfachschul-Absolventen, die in diesen Schulen keine vollqualifizierende Berufsausbildung erhalten haben und
- der Nachfrage von Bildungspendlern aus den neuen Ländern.



Alle Nachfragergruppen zusammen, ergeben für 1992 einen geschätzten Gesamtbedarf von 555 000 Ausbildungsstellen. Davon entfallen rund 535 000 auf Nachfrag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voraussichtlich 20 000 auf Ausbildungs-pendler und übersiedelnde Lehrlinge aus den neuen Ländern. Der Prognosewert unterscheidet sich damit nur wenig vom Nachfrage-Ist des Jahres 1991 (551 000). Der seit Jahren anhaltende, sinkende Trend der Nachfrageentwicklung dürfte damit zum Stillstand gekommen sein und sich wieder umkehren.

Die einzelnen Nachfrage-Komponenten sind das Produkt aus den vorausgeschätzten Schulabgängerzahlen 1992 und den Schätzwerten für die zugehörigen Übergangsquoten. Bei den Schulabgängern handelt es sich um Dat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vgl. **Tabelle 1.6**). Die Übergangsquoten stützen sich auf fortgeschriebene Daten aus einer Schulabgängerbefrag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aus dem Vorjahr. (Einzelheiten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56 ff.). Der Vorausschätzung liegen folgende Annahmen zugrunde:

1992 ist mit 472 100 Schulabgängern aus der Sekundarstufe I (1991 477 000) zu rechnen. 52 % kommen aus Hauptschulen und 48 % verfügen über einen Realschul- bzw. einen vergleichbaren Abschluß. Ungefähr 70 % (Vorjahr 67 %) oder 330 000 (1991 320 000) dürften einen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 anstreben. Die Chancen von Hauptschülern ohne Abschluß sowie von jugendlichen Ausländern werden sich weiter verbessern, direkt nach Schulende, d. h. ohne den Besuch des Berufsgrundbildungs- oder Berufsvorbereitungsjahres einen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 zu finden.

Im Jahresdurchschnitt von 1991 und 1992 werden voraussichtlich 244 000 Schulabgänger (Vorjahr 257 000) mit Fachhoch- und Hochschulreife die allgemeinbildenden Schulen, Fachoberschulen und Fachgymnasien verlassen. 25 % dürften vor dem Studium bzw. anstatt eines Studiums eine Lehre absolvieren. Angesichts der hohen und wahrscheinlich auch 1992 noch wachsenden Studienneigung, wird die Übergangsquote ins duale System (1991 27 %), die vor einigen Jahren noch bei etwa 33 % lag, weiter rückläufig sein. Der geschätzte Nachfragebeitrag der „Abiturienten“ sinkt daher von 69 000 auf 61 000 ab.

1992 werden voraussichtlich 24 000 Jugendliche (1991 25 600) das Berufsvorbereitungsjahr verlassen. Auch deren Ausbildungschancen nehmen gegenüber früher zu. Bei einer geschätzten Übergangsquote von 80 % ist mit 19 000 Nachfragern zu rechnen. Die Nachfrage von Abgängern aus dem Berufsgrundbildungsjahr könnte 27 000 betragen. Sie ergibt sich aus 30 000 Absolventen und einer Übergangsquote von 90 %. Darin ist berücksichtigt, daß größtenteils nur noch Schüler ein Berufsgrundbildungsjahr ableisten, für die der BGJ-Besuch verpflichtender Teil der anschließenden dualen Ausbildung ist (vgl. **Kapitel 1.3.1**).

Im nächsten Jahr werden etwa 162 000 Schüler die Berufsfachschulen verlassen. Der für die Schätzung verwandte Verfahrens-ansatz benützt die Schülerstromrechnung des Kapitels 1.3.1. Danach setzt sich die Absolventenzahl 1992 zusammen aus:

- den Schulabgängern einjähriger Berufsfachschulen, das sind 40 % der Schulanfänger 1990/91 (154 000);
- den Schulabgängern zweijähriger Berufsfachschulen, das sind 50 % der Schulanfänger 1989/90 (165 000) und
- den Schulabgängern dreijähriger Berufsfachschulen, das sind 10 % der Schulanfänger 1988/89 (182 000).

Gemäß einer Aufschlüsselung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beträgt das Verhältnis 1989/90 der Schulanfänger in Berufsfachschulen, die sich in einem vollqualifizierenden Ausbildungs-gang befinden, etwa 25 % zu 75 %. Die Vollqualifizierung

bezieht sich zu einem sehr großen Teil (etwa 94 % der Schulanfänger) auf Berufe außerhalb des Berufsbildungsgesetzes bzw. der Handwerksordnung (vor allem auf Assistenten- und sozialpflegerische Berufe). Nur 6 % der Schulanfänger in Berufsfachschulen wurden 1989/90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unterrichtet.

Dementsprechend wird es 1992 ungefähr 121 000 Berufsfachschulabsolventen geben, denen man nur eine berufliche Grundbildung vermittelt hat. Eine Übergangsquote von etwa 83 % hätte dann rund 100 000 Ausbildungsplatz-Nachfrager zur Folge.

Die letzte Komponente im Schätzansatz für die Nachfrage 1992 sind Jugendliche aus neuen Ländern, die im Westen einen Ausbildungsbetrieb finden werden. Das können entweder Ausbildungs-pendler oder übersiedelnde Lehrlinge sein. Die vorliegenden Informationen für das Ausbildungsjahr 1991/92 hierzu erreichen nach einer Erhebung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eine Größenordnung von rund 22 000 Personen, nach einer Umfrag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n Berufsschul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ohne Berlin) rund 20 000 Personen. Der Schätzwert für 1992 wird deshalb ebenfalls mit 20 000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angesetzt.

Die Summe aus den fünf Komponenten ergibt für 1992 550 000 Bewerber.

#### *Neue Länder*

Zur Vorausschätzung der Lehrstellennachfrage in den neuen Ländern sind zwei Informationen erforderlich:

- die Zahl der Schüler in den Klassenstufen 9, 10 und 12 sowie im Berufsgrundbildungs- und Berufsvorbereitungsjahr;
- das Bildungs- und Ausbildungsverhalten dieser Schüler auf dem Hintergrund der schulrechtlichen Regelungen in den einzelnen Ländern.

In Brandenburg einschließlich Berlin (Ost) geht die Schulpflicht bis zur Klassenstufe 10, in den anderen Ländern bis zur Klassenstufe 9. Über das Bildungs- und Ausbildungsverhalten dieser Schüler ist im **Kapitel 1.5.3** berichtet worden.

Für die Vorausschätzung der 1992 zu erwartenden Ausbildungsplatznachfrage werden folgende Annahmen getroffen, die weitgehend den Annahmen entsprechen, die der Prognos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zugrunde liegen (vgl. **Teil I, Kapitel 4.2.1**):

- Nach der Klasse 9 scheiden in vier der neuen Länder (ohne Brandenburg und ohne Berlin (Ost)) 30 % der Schüler aus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aus. 80 % von ihnen fragen einen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 nach;
- die Schulabgängerquote aus der Klasse 10 beträgt (einschließlich Brandenburg und Berlin (Ost)) 70 %. Von ihnen streben 85 % eine duale Ausbildung an;
- von den Absolventen der Klasse 12 wird jeder vierte sich um eine betriebliche Ausbildung bemühen;
- alle Absolventen des Berufsgrundbildungs- und des Berufsvorbereitungsjahres sowie der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 40 AFG) werden eine Ausbildung im dualen System anstreben.

Entsprechend diesen Annahmen kann der Prognosewert für die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2 wie folgt errechnet werden:

- Aus der Klasse 9 werden von den 183 000 Schülern rund 42 000 die Schulen verlassen und 33 000 einen Ausbildungsplatz nachfragen;

- aus der Klasse 10 werden 101 000 der insgesamt 145 000 Schüler die Schule beenden; unter ihnen werden weitere 85 000 eine duale Ausbildung anstreben;
- rund 6 000 der 24 000 Schulabgänger aus der Klasse 12 werden 1992 Ausbildungsplatznachfrager sein;
- hinzu kommen rund 20 000 Absolventen der beruflichen Schulen und aus Bildungsmaß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Summe der Schätzkomponenten ergibt einen rechnerischen Prognosewert der Nachfrage in den neuen Ländern von 144 000 Ausbildungsplatzbewerbern für das Jahr 1992. Dieses Ergebnis dürfte eine Obergrenze der 1992 zu erwartenden Ausbildungsplatznachfrage sein, da die verwendeten Schulabgängerzahlen auf einer Fortschreibung der Schülerzahlen aus der Schuljahresanfangsstatistik der früheren DDR des Schuljahres 1990/91 basieren und Übersiedlerströme des Jahres 1991 nicht berücksichtigt sind. Die voraussichtliche Lehrstellennachfrage dürfte sich deshalb eher an der unteren Grenze einer Nachfrage-Spannweite von 140 000 bis 150 000 Jugendlichen bewegen.

Nicht einzuschätzen ist die Zahl von „Konkurslehrlingen“, die die Nachfrage nach Ausbildungsstellen 1992 in den neuen Ländern weiter erhöhen wird. Durch die Aufnahme von Ausbild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n einer Größenordnung von schätzungsweise rund 20 000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wird in den neuen Ländern — Konkurslehrlinge nicht berücksichtigt — ein Lehrstellenangebot von 120 000 bis 130 000 Plätzen benötigt, das sind — ebenfalls ohne Berücksichtigung der Nachfrage von Konkurslehrlingen des Jahres 1991 — 25 000 bis 35 000 mehr als ein Jahr zuvor.

*Alternativrechnungen zur Vorausschätz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2 in den neuen Ländern:  
Ergebnisse des „Arbeitsmarkt-Monitors“ vom November 1991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Die Vorausschätz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ist wegen der veränderten Rahmenbedingungen — namentlich der Einführung der neunjährigen Schulpflicht in vier der neuen Länder — mit zahlreichen Unsicherheiten behaftet. Derzeit ist noch ungewiß, wieviele Schüler der 9. Klassen davon Gebrauch machen werden. Im November 1991 gaben nur 13 % der befragten Schüler der 9. Klasse (alle Schularten) an, daß sie 1992 eine

**Übersicht 45: Schüler an allgemeinbildenden Schulen im Alter von 15 bis unter 20 Jahren (Geburtsjahrgang 1976 bis 1972) in den neuen Ländern nach Schuljahrgang und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2 (Stand November 1991)**

Schuljahrgang	Zahl der Schüler	Schüler, die 1992 eine Lehre beginnen wollen	Nachfragequote
			Prozent
7. und 8. Klasse	9 000	1 000	16
9. Klasse	98 000	13 000	13
10. Klasse	151 000	74 000	49
11. Klasse	52 000	1 000	2
12. und 13. Klasse	26 000	5 000	19
Ohne Angabe	7 000	1 000	14
<b>Insgesamt</b>	<b>344 000</b>	<b>95 000</b>	<b>28</b>

Quelle: IAB-Kurzbericht Nr. 5 vom 19. Februar 1992 (Arbeitsmarkt-Monitor; Wiederholungsbefragung vom November 1991)

**Übersicht 46: Zusammensetzung der voraussichtlichen Ausbildungsstellennachfrage 1992 nach Nachfragegruppen auf der Basis des Arbeitsmarkt-Monitors (Stand November 1991)**

Nachfragegruppen	Zahl der Personen
Schulabgänger aus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sgesamt	106 000
Darunter:	
Geburtsjahrgang 1976 bis 1972 (vgl. Übersicht 45)	95 000
Geburtsjahrgang 1977, 9. Klasse <sup>1)</sup>	11 000
Schulabgänger aus beruflichen Vollzeitschulen und Teilnehmer von AFG-Lehrgängen	15 000
Arbeitslose, Wehrpflichtige, Auszubildende und Berufstätige unter 20 Jahren	18 000
Ältere Jugendliche (20 bis 24 Jahre) <sup>2)</sup>	11 000
<b>Insgesamt</b>	<b>150 000</b>

<sup>1)</sup> Schätzung: 40 Prozent des Geburtsjahrgangs 1977 befinden sich in der 9. Klasse; von diesen streben (wie beim Jahrgang 1976) 13 Prozent eine Lehrausbildung an.

<sup>2)</sup> Quelle: Arbeitsmarkt-Monitor für die 17- bis 65jährigen

Quelle: IAB-Kurzbericht Nr. 5 vom 19. Februar 1992 (Arbeitsmarkt-Monitor; Wiederholungsbefragung vom November 1991)

Lehre beginnen wollen. Auch unter den Schülern der 10. Klasse scheint die Ausbildungsplatznachfrage — zumindest zu diesem frühen Zeitpunkt — noch nicht sehr ausgeprägt zu sein: Lediglich die Hälfte von ihnen plant im Herbst den Übergang ins duale System (vgl. Übersicht 45). Dagegen ist ein deutlicher Trend hin zum Abitur als angestrebtem Schulabschluß erkennbar: 59 % der befragten Schüler (alle Schularten) wollen das Abitur machen, 36 % einen mittleren Bildungsabschluß und nur 4 % den Hauptschulabschluß.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 je näher der Termin der Schulentlassung rückt — das tatsächliche Verhalten der Jugendlichen von den ursprünglichen Planungen abweichen kann.

Aus der Befragung vom November 1991 des IAB ergibt sich, daß 1992 hochgerechnet voraussichtlich rund 150 000 junge Menschen aus den neuen Ländern eine Ausbildung im dualen System beginnen wollen.

Die Nachfrage setzt sich wie folgt zusammen (vgl. Übersicht 46):

- 106 000 Schulabgänger allgemeinbildender Schulen,
  - 15 000 Schulabgänger berufsbildender Schulen, Teilnehmer an AFG-Lehrgängen,
  - 18 000 Sonstige Personengruppen unter 20 Jahren (Arbeitslose, Wehrpflichtige und Berufstätige)
  - 11 000 Ältere Jugendliche (20 bis 24 Jahre; ohne Spezifizierung)
- = 150 000 Nachfrage insgesamt.**

In den hier ermittelten Nachfragegrößen sind Jugendliche, deren Lehrverträge im Laufe des Ausbildungsjahres 1991/92 aus betriebsbedingten Gründen gelöst werden, nicht explizit enthalten.

Bis Ende Januar 1991 wurden von den Arbeitsämtern rund 2 500 Lehrvertragslösungen registriert. Auch wenn über den Gesamtumfang dieses Personenkreises noch keine Informationen vorliegen, könnte nach den Erfahrungen des Jahres 1991 und dem auch für 1992 erwarteten weiteren Arbeitsplatzabbau in den neuen Ländern die Zahl der „Konkurslehrlinge“ bis Ende September 1992 auf rund 10 000 ansteigen.

## 2. 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 2.1 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Generelle Entwicklung der Angebots-Nachfrage-Relation

Die Entwicklung der Ausbildungsstellensituatio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war 1991 durch nochmals steigende Zahlen unbesetzter Ausbildungsstellen, einer geringeren Anzahl unvermittelter Bewerber und durch den beachtlichen Zustrom von Lehrstellenbewerbern aus den neuen Ländern geprägt (vgl. auch **Kapitel 1.1**). Zwar nahm dadurch die Angebots-Nachfrage-Relation (Kurzbezeichnung: ANR) nur noch um 3 Prozentpunkte, von 118 auf 121, zu. Ohne den Bewerberzustrom aus den neuen Ländern wäre 1991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e Relation von etwa 126 erreicht worden.

Im Zuge dieser Entwicklung hat sich die Spannweite zwischen den regionalen Extremwerten der Angebots-Nachfrage-Relation erstmalig wieder reduziert (vgl. **Übersicht 47**). Die Zahl der Arbeitsamtsbezirke in der Gebietsgruppe I (ANR-Werte unter 110) sank zwischen 1990 und 1991 von 41 auf 20 und die in den Gebietsgruppen 2 (ANR-Werte von 110 bis unter 120) und 3 (ANR-Werte von 120 bis unter 130) stiegen entsprechend an.

Die **Übersicht 48** demonstriert dies am Beispiel einiger Regionen in Nordrhein-Westfalen und Bayern<sup>1)</sup>.

#### Auswirkungen des Zustroms von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Hinter diesem Zahlenbild steht jedoch kein kompensierender Automatismus. Es handelt sich vielmehr um das Ergebnis des Zustroms von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Vor allem Regionen aus den östlichen Randgebieten der alten Bundesländer haben überproportional viele Ausbildungsbeginner aus den neuen Ländern aufgenommen. Das gilt insbesondere für Berlin (West),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Hessen und Bayern. Auf grenzfernere Gebiete wie Nordrhein-Westfalen, das Saarland oder Rheinland-Pfalz, die in der Vergangenheit arbeitsmarktbedingt meist zu den Regionen mit vergleichsweise ungünstigen regionalen Kennzifferwerten gehörten, trifft dies weniger zu.

Dahinter stehen folgende Wirkungszusammenhänge:

Erstens, die demografische Entwicklung hat in den Schulabgängerzahlen ihren Tiefpunkt noch nicht erreicht. Deshalb werden im Durchschnitt mehr Ausbildungsplätze frei und stehen zur Wiederbesetzung an, als für die Versorgung der einheimischen

<sup>1)</sup> Statistische Informationen zur Ausbildungssituation in den einzelnen Arbeitsamtsbezirken sind in den Tabellen 2/1 bis 2/6 ausgewiesen.

**Übersicht 47: Zahl der Arbeitsamtsbezirke nach Angebots-Nachfrage-Relation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0 und 1991**

Land	Arbeitsamtsbezirke mit ... angebotene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je 100 Nachfrager											
	109,9 und weniger		110,0 bis 119,9		120,0 bis 129,9		130,0 bis 139,9		140,0 bis 149,9		150,0 und mehr	
	1990	1991 <sup>1)</sup>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1990	1991
<b>Altes Bundesgebiet</b>	<b>41</b>	<b>21</b>	<b>41</b>	<b>51</b>	<b>26</b>	<b>30</b>	<b>15</b>	<b>18</b>	<b>12</b>	<b>11</b>	<b>7</b>	<b>11</b>
Nördliche Bundesländer	41	19	26	42	9	12	1	2	—	2	—	—
Berlin (West)	1	1	—	—	—	—	—	—	—	—	—	—
Schleswig-Holstein	4	2	2	4	1	—	—	1	—	—	—	—
Hamburg	1	1	—	—	—	—	—	—	—	—	—	—
Niedersachsen	6	4	11	12	3	4	—	—	—	—	—	—
Bremen	2	2	—	—	—	—	—	—	—	—	—	—
Nordrhein-Westfalen	23	6	8	19	2	6	—	1	—	1	—	—
Hessen	4	3	5	7	3	2	1	—	—	1	—	—
Südliche Bundesländer	—	2	15	9	17	18	14	16	12	9	7	11
Rheinland-Pfalz	—	—	5	5	4	4	2	2	—	—	—	—
Baden-Württemberg	—	—	5	1	3	6	7	6	7	6	2	5
Bayern	—	1	2	2	10	8	5	8	5	2	5	6
Saarland	—	1	3	1	—	—	—	—	—	1	—	—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Übersicht 56, Seite 62

<sup>1)</sup> 1990 nur ein Arbeitsamtsbezirk (Hamm) unter 100 (98,9)

1991 vier Arbeitsamtsbezirke (Hamm, Bad Hersfeld, Berlin (West) und Marburg unter 100 (97,9; 98,7; 99,7; 99,8))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tatistik, 1990 und 1991;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0. September

**Übersicht 48: Gegenläufige Entwicklungen der Angebots-Nachfrage-Relation in Nordrhein-Westfalen und Bayern 1990 und 1991**

Arbeitsamtsbezirk	1990	1991
Ahlen	111	132
Coesfeld	120	140
Hagen	105	123
Herford	108	121
Rheine	107	120
Solingen	114	128
<b>Nordrhein-Westfalen insgesamt</b>	<b>109</b>	<b>115</b>
Bamberg	148	135
Coburg	143	130
Hof	126	113
Weiden	136	111
Pfarrkirchen	122	109
Passau	142	134
<b>Bayern insgesamt</b>	<b>133</b>	<b>135</b>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1990 und 1991;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0. September

jungen Bevölkerung gebraucht werden. Überdies ist der Lehrbedarfsbedarf wegen des steigenden Fachkräftebedarfs anhaltend hoch. Die „Normaltendenz“ der unbesetzten Ausbildungsplätze ist daher ohne Zuwanderer, wie schon 1990 und 1989, auf hohen prozentualen Anstieg ausgerichtet.

Zweitens, Auszubildende aus den neuen Ländern verringern unter diesen Bedingungen die unbesetzten Plätze zugunsten neu abgeschlossener Ausbildungsverträge. Das Ausbildungsplatzangebot bleibt folglich unverändert, die Ausbildungsplatznachfrage steigt dagegen und die Angebots-Nachfrage-Relation wird kleiner.

Nach den Ergebnissen einer Umfrage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n Berufsschulen der alten Bundesländer (ohne Berlin) sind hochgerechnet gut 20000 Schüler in den ersten Klassen an Teilzeitberufsschulen Übersiedler oder Bewohner der neuen Länder (Bildungspendler). Dies entspricht ungefähr 15 Schülern pro Berufsschule. I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sind nur gut 10000 dieser Bewerber erfaßt. Die Aufnahme der Auszubildenden aus den neuen Länder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st daher größtenteils nicht mit Hilfe der Arbeitsämter erfolgt.

Auf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Nordrhein-Westfalen, Hessen und Bremen sowie auf Hamburg entfallen 14000 bis 15000 Schüler. Die übrigen Bundesländer, im wesentlichen Bayern und Baden-Württemberg, dürften etwa 6000 bis 7000 Lehrlinge aus den neuen Ländern neu aufgenommen haben.

Die aufnehmenden Arbeitsamtsbezirke können bis zu einem gewissen Grade an der Entwicklung der unbesetzten Ausbildungsplätze erkannt werden. Vorausgesetzt, der Zustrom von Lehrlingen aus den neuen Ländern ist quantitativ von Gewicht, dann stehen sehr hohe Anstiege der unbesetzten Plätze 1990/89 und 1989/88 rückläufigen oder stagnierenden Entwicklungen 1991/90 gegenüber. Im Prinzip könnte es sich in diesen Fällen auch um einen abrupten Einbruch im betrieblichen Meldeverhalten handeln, etwa dann, wenn die Betriebe die Aussichtslosigkeit ihrer Lehrstellenangebote erkennen und in bestimmten Regionen von einem Jahr auf das andere den Arbeitsämtern nur noch einen Teil der freien Stellen melden. Unter den derzeitigen Umständen dürfte dies sehr unwahrscheinlich sein.

**Übersicht 49: Arbeitsamtsbezirke der alten Bundesländer mit sicheren Hinweisen auf Versorgungsleistungen für Auszubildende aus den neuen Ländern**

Arbeitsamtsbezirk	ANR 1990	ANR 1991	Unbesetzte Plätze 1991	
			1991	1990
Prozent				
Bad Oldesloe	127	130	11	221
Elmshorn	110	112	8	127
Lübeck	107	104	-34	80
Neumünster	117	114	-10	91
Bremen	106	106	-21	106
Bremerhaven	103	104	-8	72
Emden	110	114	-3	113
Göttingen	114	110	-22	95
Helmstedt	110	109	-12	59
Hildesheim	122	111	-44	107
Nienburg	124	124	1	107
Uelzen	112	105	-51	51
Bonn	116	114	-22	142
Dortmund	103	106	4	90
Meschede	127	120	-26	104
Mönchengladbach	110	113	-3	265
Oberhausen	107	105	-11	68
Bad Hersfeld	102	99	-80	64
Gießen	123	125	7	36
Hanau	124	118	-23	186
Kassel	108	109	1	23
Marburg	106	100	-85	50
Wiesbaden	125	113	-48	210
Bad Kreuznach	117	115	-19	153
Mainz	121	125	1	48
Mayen	131	119	-45	74
Landau	125	116	-36	57
Neuwied	122	125	7	77
Trier	120	121	-7	66
Aalen	133	131	-6	80
Freiburg	128	128	3	70
Heilbronn	145	131	-30	45
Konstanz	149	147	-9	243
Ludwigsburg	162	154	-13	41
Nagold	151	150	5	264
Offenburg	135	140	8	58
Ravensburg	135	131	-13	27
Rottweil	144	141	-7	207
Waiblingen	135	121	-45	106
Schwäbisch Hall	136	124	-23	37
Stuttgart	123	116	-27	21
Tauberbischofsheim	147	144	-2	107
Villingen-Schwenningen	133	131	-6	104
Bamberg	148	135	-24	-1 <sup>1)</sup>
Coburg	143	130	-32	25 <sup>1)</sup>
Hof	126	112	-60	-28 <sup>1)</sup>
Schweinfurt	126	121	-15	41
Weiden	136	111	-61	12 <sup>1)</sup>
Würzburg	123	121	-10	67
Freising	189	181	-7	57
Passau	142	134	-24	56
Berlin (West)	102	100	-37	-39 <sup>1)</sup>

<sup>1)</sup> Arbeitsamtsbezirke waren schon 1990 Ziel von Ausbildungspendlern aus den neuen Ländern. Die prozentuale Veränderung der unbesetzten Plätze 1989 betrug in Bamberg 165 Prozent, in Coburg 112 Prozent, in Hof 65 Prozent sowie in Weiden 129 Prozent.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In der **Übersicht 49** sind 52 Arbeitsamtsbezirke mit diesen Eigenschaften aufgelistet. Sicher gibt es noch mehr Regionen, die Auszubildende aus den neuen Ländern aufgenommen haben. Sie lassen sich jedoch nicht aus dem Strukturbild der unbesetzten Plätze, also mit einem relativ groben Instrument, herausfiltern. Das Prinzip zeigt sich aber auch so: In den 52 Arbeitsamtsbezirken sind die unbesetzten Plätze von 1990 auf 1991 um insgesamt 17 % und die Angebots-Nachfrage-Relation von 123 auf 119 gesunken. Dagegen sind die unbesetzten Plätze in den übrigen 90 Regionen der alten Bundesländer um 34 % und die Angebots-Nachfrage-Relation von 115 auf 123 gestiegen.

#### Berufsspezifische Angebots-Nachfrage-Relationen

Die bislang dargestellte, alle Ausbildungsberufe umfassende Angebots-Nachfrage-Relation (Kurzbezeichnung Gesamt-ANR) kann in berufsspezifische Komponenten (Beruf-ANR) zerlegt werden. Erforderlich sind lediglich die Neuabschlüsse nach Berufen, sowie die zugehörigen unbesetzten Plätze und unvermittelten Bewerber. Die Analyse der berufsspezifischen Relationen läßt zwei Besonderheiten erkennen:

Erstens, die berufsspezifischen Komponenten (Beruf-ANR) streuen beträchtlich um die Gesamt-ANR (vgl. **Übersicht 50**). Wird die Gesamt-ANR gleich 100 gesetzt, dann ergeben sich berufliche Strukturquoten, die zwischen 85 % bei den Organisations-, Verwaltungs- und Büroberufe und 156 % bei den Ernährungsberufen schwanken.

Zweitens, betrachtet man die Gesamt-ANR in aufsteigender Folge, dann verbessert sich die Situation in den begehrteren Berufen nur unterproportional. Dies erkennt man daran, daß die berufsspezifischen Angebots-Nachfrage-Relationen der Gesamt-ANR abgeschwächt folgen. Bei den weniger begehrten Berufen ist es umgekehrt: Die berufsspezifischen Relationen steigen stärker als die Gesamt-ANR (vgl. **Übersicht 51**).

Dies wird beispielhaft an Hand der Ernährungsberufe (ER) und der Organisations-, Verwaltungs- und Büroberufe (OR) verdeutlicht:

	Gebietsgruppen				
	1	2	3	4	5
Gesamt-ANR:	106	115	124	134	152
Beruf-ANR					
(ER):	133	169	203	223	272
Strukturquote					
(ER):	125%	147%	164%	166%	179%
Beruf-ANR					
(OR):	99	102	105	108	112
Strukturquote					
(OR)	93%	89%	85%	82%	73%

Strukturquote bei Gesamt-ANR = 100

Die Angebots-Nachfrage-Relationen der Ernährungsberufe liegen in der Gebietsgruppe 1 im Mittel um 25 % und in der Gebietsgruppe 5 um 79 % über der Gesamt-ANR. Die ANR-Werte der Organisations-, Verwaltungs- und Büroberufe unterschreiten in der Gebietsgruppe 1 die Gesamt-ANR um 7 % und in der Gebietsgruppe 5 um 27 %.

#### Übersicht 50: Berufsspezifische Komponenten der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alten Bundesgebiet 1991

Gesamt-ANR	124 <sup>1)</sup>
Metallberufe	138
Elektroberufe	119
Textil-, Bekleidungs-, Lederberufe	171
Ernährungsberufe	193
Bau-, Baunebenberufe, Tischler	167
Technische Berufe	105
Waren- und Dienstleistungskaufleute	120
Verkehrsberufe	115
Organisations-, Verwaltungs-, Büroberufe	105
Übrige Dienstleistungsberufe	114
Körperpflege-/Gästebetreuer-/Hauswirtschaftliche Berufe	139
Übrige Fertigungsberufe	105

<sup>1)</sup> Bei dieser Darstellung handelt es sich um gewöhnliche Mittelwerte statt sonst verwandter gewogener arithmetischer Mittelwerte.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 Übersicht 51: Gesamt- und berufsspezifische Angebots-Nachfrage-Relationen nach Gebietsgruppen im alten Bundesgebiet 1990/1991

	Gebietsgruppen <sup>1)</sup>				
	1	2	3	4	5
Gesamt-ANR <sup>2)</sup>	106	115	124	134	152
Berufsspezifische Strukturquoten <sup>3)</sup>					
Metallberufe	101	107	111	113	125
Elektroberufe	100	97	94	93	98
Textil-, Bekleidungs-, Lederberufe	107	121	143	216	130
Ernährungsberufe	125	147	164	166	179
Bau-, Baunebenberufe, Tischler	107	117	132	143	182
Technische Berufe	92	86	83	80	80
Waren- und Dienstleistungskaufleute	98	98	98	99	93
Verkehrsberufe	95	96	90	84	98
Organisations-, Verwaltungs-, Büroberufe	93	89	85	82	73
Übrige Dienstleistungsberufe	98	95	90	90	86
Körperpflege-/Gästebetreuer-/Hauswirtschaftliche Berufe	109	115	113	109	113
Übrige Fertigungsberufe	95	90	85	80	73

<sup>1)</sup> Gebietsgruppe 1: ANR 109,9 und weniger  
 Gebietsgruppe 2: ANR 110,0 bis 119,9  
 Gebietsgruppe 3: ANR 120,0 bis 129,9  
 Gebietsgruppe 4: ANR 130,0 bis 139,9  
 Gebietsgruppe 5: ANR 140,0 und mehr

<sup>2)</sup> Ungewichtete (gewöhnliche) Mittelwerte

<sup>3)</sup> Beruf-ANR zu Gesamt-ANR in Prozent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Im folgenden wird aus jeder Gebietsgruppe beispielhaft ein typischer Arbeitsamtsbezirk herausgegriffen und seine berufsspezifischen Angebots-Nachfrage-Relationen in den Metallberufen (ME), Elektroberufen (EL), Ernährungsberufen (ER), Bauberufen (BA), sowie den Kaufleuten (KA) und Gästebetreibern (GÄ) gegenübergestellt. Auch hier erkennt man den selektiven Zusammenhang zwischen der Gesamt-ANR und ihren berufsspezifischen Komponenten (vgl. **Abbildungen 1 bis 4**).

	ME	EL	ER	BA	KA	GÄ
West-Berlin	1	99	102	119	98	99
Celle	2	125	119	167	139	119
Neuwied	3	132	128	228	154	130
Montabaur	4	171	129	243	186	135
Ludwigsburg	5	213	165	280	291	138

## 2.2 Angebots-Nachfrage-Relation in den neuen Ländern

Die Auszählung der Meldungen der zuständigen Stellen in den neuen Ländern zu den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n hat eine Gesamtzahl von 74 600 Auszubildenden ergeben. Gemessen an den Ergebnisse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bedeutet dieses Meldeergebnis eine erhebliche Untererfassung der tatsächlichen Vertragszahl. Dies wurde teilweise durch verzögerte Meldungen der Betriebe an die zuständigen Stellen, teilweise aber auch durch die unvollständige Erfassung der sogenannten „Konkurslehrlinge“ verursacht. Deshalb dürfte im Verlauf der nächsten Zeit noch mit Nachmeldungen zu rechnen sein.

Für die Analyse der Ausbildungsstellensituation nach Arbeitsamtsbezirken mit dem Instrument der Angebots-Nachfrage-Relation spielt die Unterfassung jedoch keine sehr große Rolle: In Sachsen wurden 21 500 Ausbildungsverträge von den zuständigen Stellen gemeldet. Die Zahl der Schüler mit Ausbildungsvertrag im ersten Schuljahr an Teilzeiterufsschulen betrug nach einer Umfrag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m Dezember 1991<sup>1)</sup> rund 25 300. Die Angebots-Nachfrage-Relation, sowohl auf der Basis der Verträge als auch auf der Grundlage der Berufsschüler errechnet, ergibt — bei 1 800 unbesetzten Plätzen und 570 unvermittelten Bewerberinnen — 106 im ersten und 105 im zweiten Fall. D. h. die Untererfassung hat lediglich eine leichte Überschätzung der Ausbildungsstellensituation zur Folge.

Dies in Rechnung gestellt, können für die neuen Länder folgende Aussagen getroffen werden:

Die mittlere Gesamt-ANR ergibt für die neuen Länder 105 angebotene Ausbildungsplätze je 100 Nachfrager. Auf Grund umfassender und flächendeckender Vollausbildungsmaßnahmen in AFG-geförderte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erreichten alle neuen Länder Angebots-Nachfrage-Relationen in der Größenordnung von 104 bis 107. Von wenigen Ausnahmen

abgesehen (Eberswalde und Oschatz) haben auch die Arbeitsamtsbezirke durchweg leichte bis größere Angebotsüberschüsse oder doch zumindest einen Gleichstand von Angebot und Nachfrage erzielt (vgl. **Übersicht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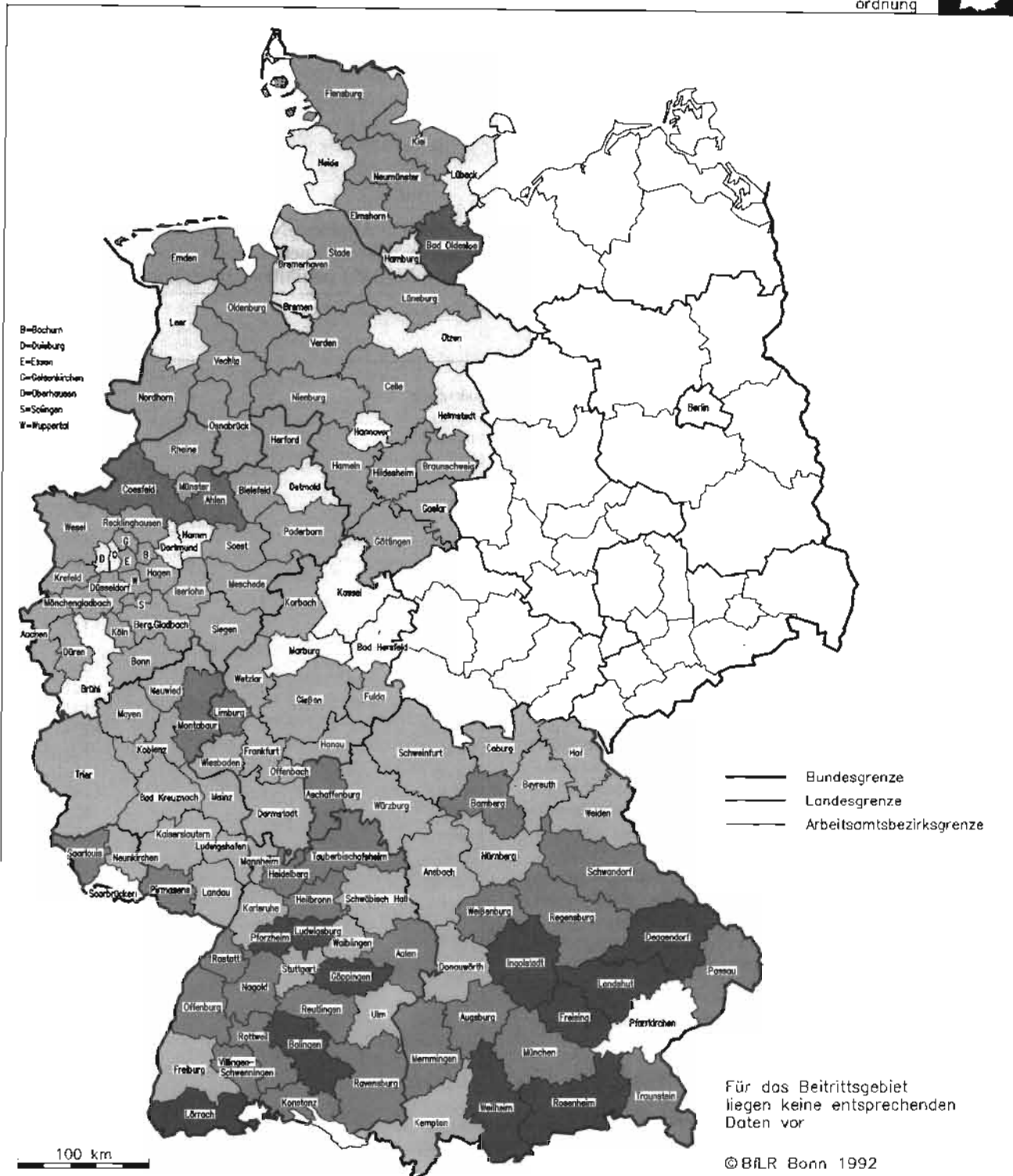
## Übersicht 52: Angebots-Nachfrage-Relation in den Arbeitsamtsbezirken der neuen Länder auf der Basis der bis 18. Dezember 1991 gezählten Ausbildungsverträge

Land bzw. Arbeitsamtsbezirk	Angebots-Nachfrage-Relation
Brandenburg	105
Cottbus	106
Eberswalde	99
Frankfurt/Oder	102
Neuruppin	106
Potsdam	114
Mecklenburg-Vorpommern	104
Neubrandenburg	105
Rostock	100
Schwerin	102
Stralsund	110
Sachsen	106
Annaberg	107
Bautzen	102
Cnemnitz	104
Dresden	106
Leipzig	114
Oschatz	85
Pirna	103
Plauen	113
Riesa	101
Zwickau	103
Sachsen-Anhalt	107
Dessau	109
Halberstadt	122
Halle	100
Magdeburg	104
Merseburg	108
Sangerhausen	100
Stendal	110
Wittenberg	124
Thüringen	105
Altenburg	100
Erfurt	106
Gera	105
Gotha	111
Jena	100
Nordhausen	105
Suhl	108
Berlin (Ost)	107
<b>Neue Bundesländer insgesamt</b>	<b>105</b>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sup>1)</sup> Eine Umfrag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m Dezember 1991 bei allen Kultusbehörden der neuen Länder ergab rund 83 000 Schüler mit Ausbildungsvertrag im ersten Berufsschuljahr

Abbildung 1  
Angebots-Nachfrage-Relation aller Berufsbereiche



Gesamtangebot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unbesetzte Ausbildungsplätze bezogen auf die Gesamtnachfrage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rechnerischer Ausgleich von Angebot und Nachfrage = 10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bis unter 11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10,0 bis unter 13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30,0 bis unter 15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50,0 und mehr

Minimum: 98,7  
Maximum: 181,1  
altes Bundesgebiet: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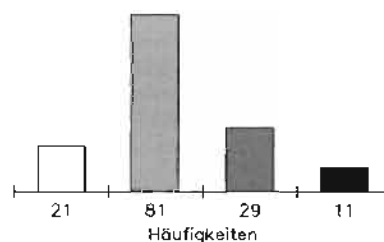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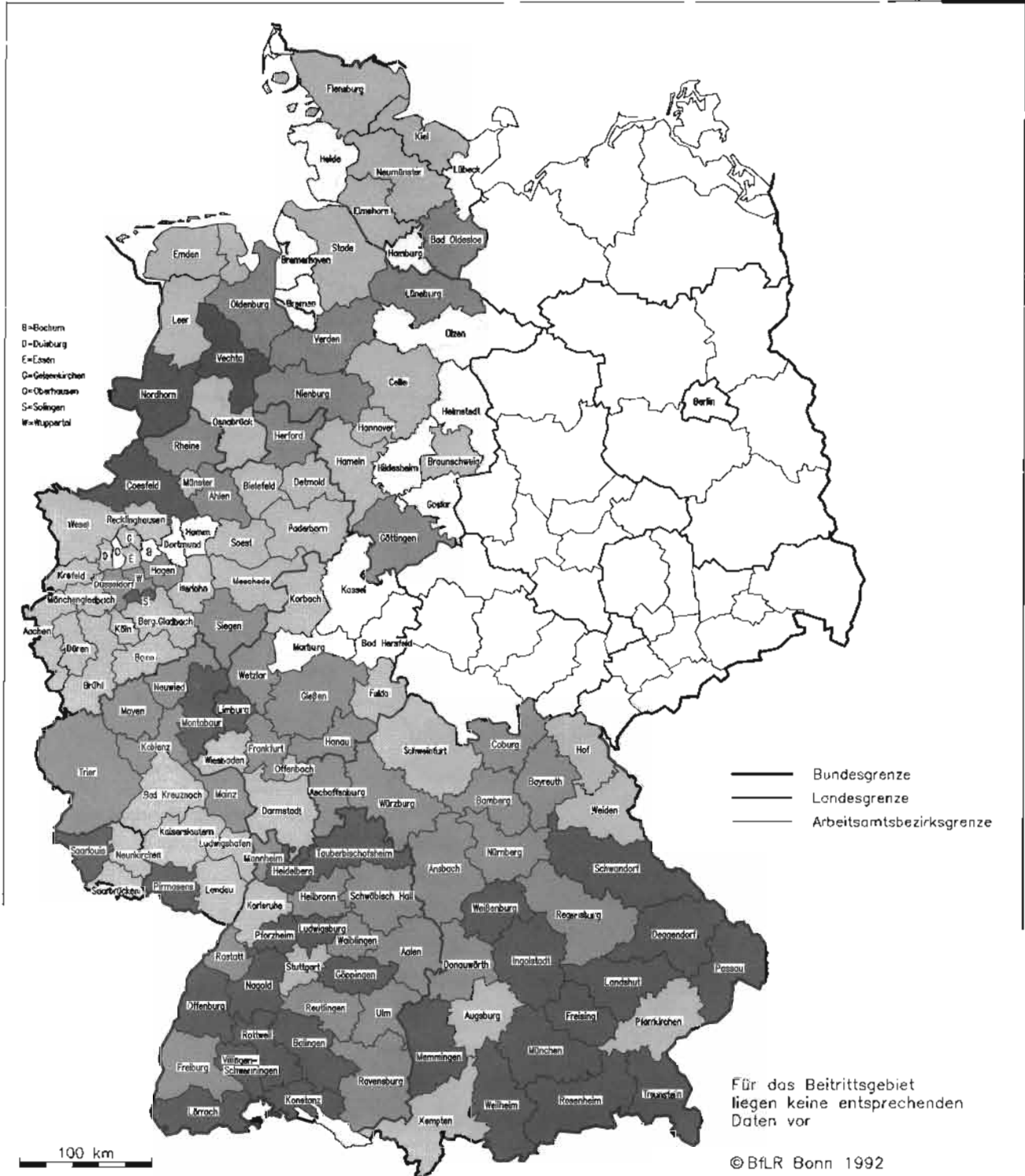


Abbildung 2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Berufsbereich Metallberufe



Gesamtangebot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unbesetzte Ausbildungsplätze bezogen auf die Gesamtnachfrage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rechnerischer Ausgleich von Angebot und Nachfrage = 100.0

Minimum: 98.6  
 Maximum: 263.2  
 altes Bundesgebiet: 133.4

- Angebots-Nachfrage-Relation bis unter 11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10.0 bis unter 13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30.0 bis unter 15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50.0 und me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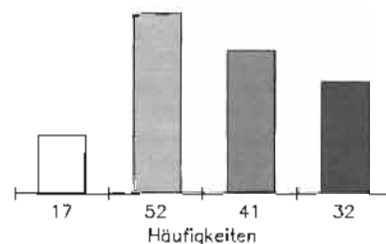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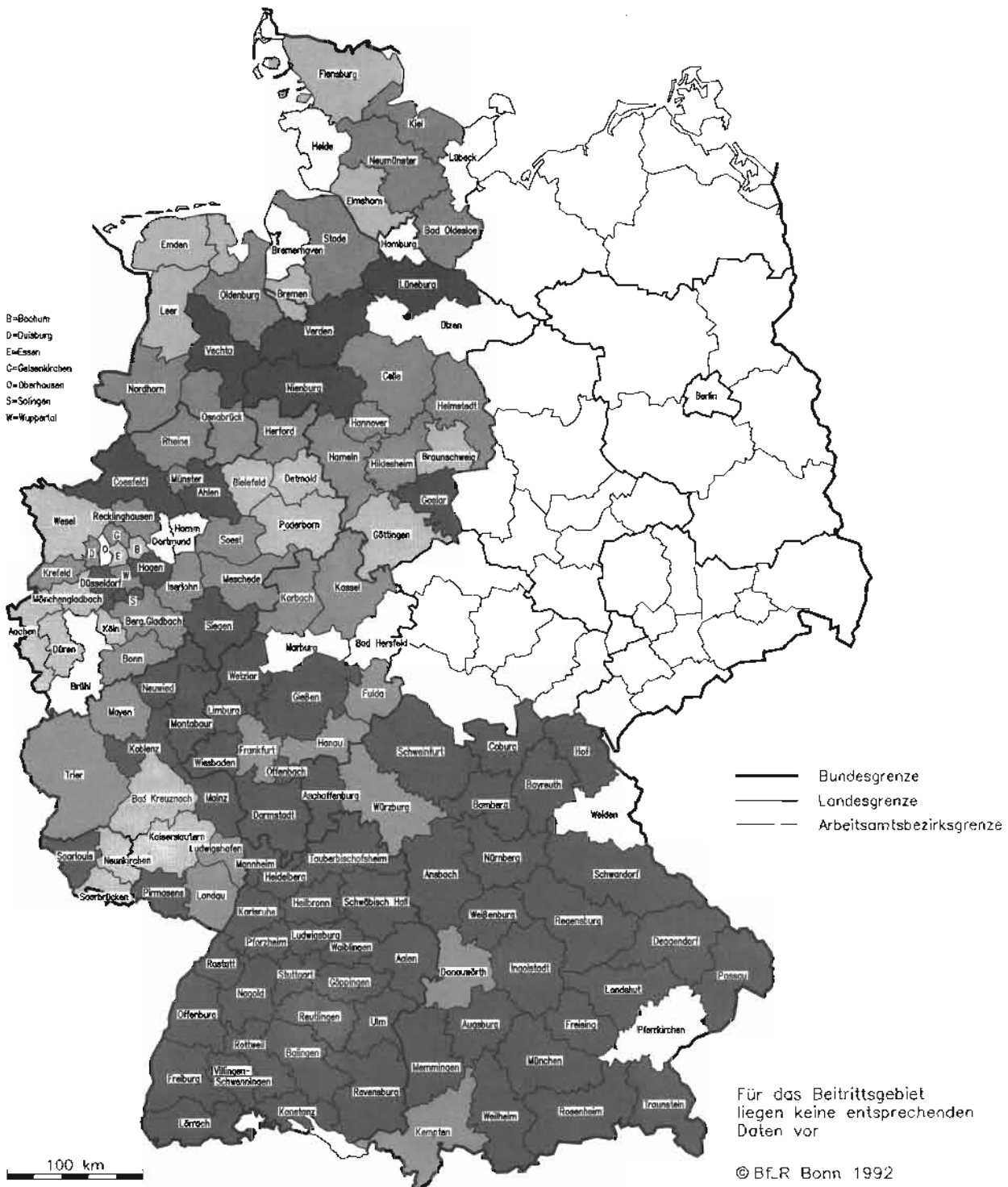




Abbildung 3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Berufsbereich Bau- und Baunebenberufe



Gesamtangebot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unbesetzte Ausbildungsplätze bezogen auf die Gesamtnachfrage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rechnerischer Ausgleich von Angebot und Nachfrage = 100.0

Minimum: 97.8  
 Maximum: 381.9  
 altes Bundesgebiet: 156.0

- Angebots-Nachfrage-Relation bis unter 11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10.0 bis unter 13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30.0 bis unter 15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50.0 und me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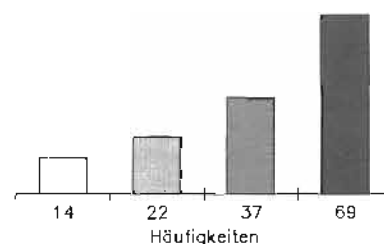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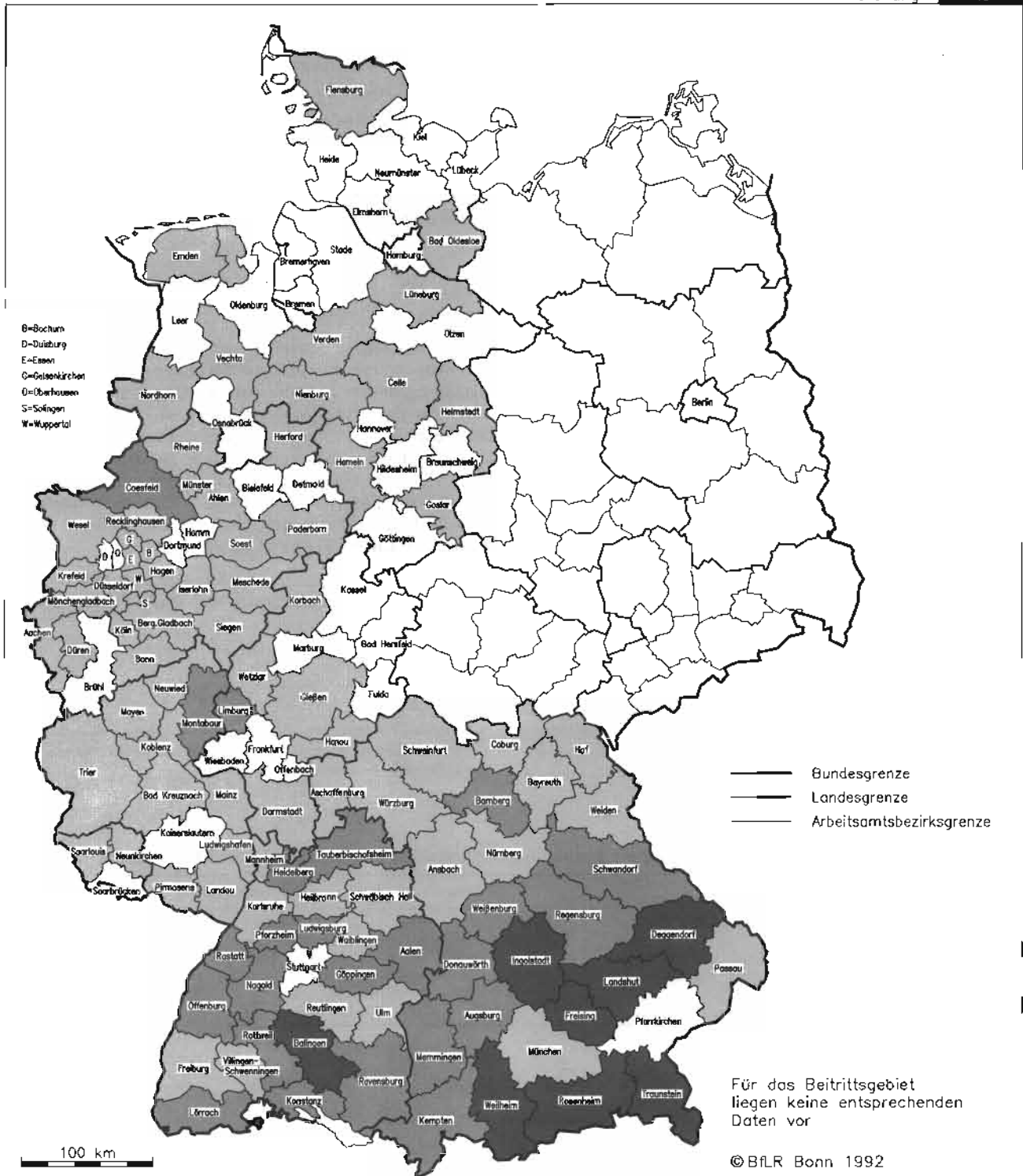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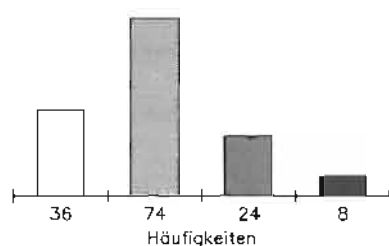
Abbildung 4  
Angebots-Nachfrage-Relation im Berufsbereich  
Waren- und Dienstleistungskaufleute



Gesamtangebot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unbesetzte Ausbildungsplätze bezogen auf die  
Gesamtnachfrage 1991: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und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rechnerischer Ausgleich von Angebot und Nachfrage = 10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bis unter 11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10.0 bis unter 13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30.0 bis unter 150.0
- Angebots-Nachfrage-Relation  
150.0 und mehr

Minimum: 97.7  
Maximum: 168.4  
altes Bundesgebiet: 116.9



## 4. Inhaltliche Gestaltung und Strukturfragen der Berufsbildung

### 4.1 Zur Angleichung der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n die Berufsbildungspraxis im alten Bundesgebiet

#### 4.1.1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Im Rahmen des „Gemeinschaftswerkes Aufschwung-Ost“ hat das Bundeskabinett am 24. April 1991 eine Reihe von Ausbildungsplatzinitiativen für die neuen Länder beschlossen. Ziel war, auf Grund der absehbaren Entwicklung auf dem Lehrstellenmarkt die Voraussetzungen dafür zu verbessern, daß jedem Jugendlichen, der dies wünscht, 1991 ein Ausbildungsplatzangebot gemacht und jeder Ausbildungsplatzverlust ersetzt werden kann. Jugendliche aus den neuen Ländern sollten in den neuen Ländern ausgebildet werden.

Im Mittelpunkt dieser Ausbildungsplatzinitiativen stand das Ausbildungsförderungs-Programm mit folgenden Bestandteilen:

- Zur Sicherung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förder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kleine Unternehmen mit einem einmaligen Zuschuß in Höhe von 5000 DM, wenn sie 1991 einen Auszubildenden einstellen oder einem Lehrling die Fortsetzung der Berufsausbildung ermöglichen (hier halbiert sich der Förderbetrag, wenn die restliche Ausbildungszeit nicht mehr als 6 Monate dauerte). Damit wird ein wirksamer Beitrag zum Auf- und Ausbau einer mittelständisch geprägten Wirtschafts- und Ausbildungsstruktur geleistet. Die Richtlinien zur Durchführung dieser finanziellen Förderung wurden vo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m 13. Juni 1991 erlassen. Die Durchführung des Programms hat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übernommen. Bis Ende 1991 sind die für 1991 vorgesehenen Mittel in Höhe von 75 Mio. DM nahezu vollständig abgeflossen. Bis Ende Februar sind 24 794 Anträge gestellt und 18 705 bewilligt worden. Damit konnten bis Ende Februar 25 846 Ausbildungsplätze gefördert werden. Es ist davon auszugehen, daß insgesamt rund 32 000 Ausbildungsplätze durch das „Sonderprogramm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gefördert werden können.
- Die Bundesverwaltung bietet in ihrem Verantwortungsbereich 10 000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in den neuen Ländern an. Entsprechende Initiativen wurden von den Landesregierungen und Kommunen der neuen Länder erwartet.
- Die Treuhandanstalt hatte darauf hingewirkt, bestehende Lehrverhältnisse in ihren Betrieben zu Ende zu führen sowie neue Ausbildungsplätze zu besetzen. Vorhandene Ausbildungskapazitäten sollten soweit als möglich erhalten und nicht benötigte Gebäude und Einrichtungen für außerbetriebliche Qualifizierungszwecke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fördert berufsvorbereitende Maßnahmen für Jugendliche (§§ 40, 40b AFG) und unter Beachtung des Vorrangs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außerbetriebliche und ausbildungsbegleitende Maßnahmen für benachteiligte Jugendliche (§ 40c AFG). Bedeutsam ist vor allem die Förderung von Ausbildungsmaßnahmen i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für nicht vermittelte Schulabgänger und Ausbildungsplatzbewerber, die ihren Ausbildungsplatz wegen Konkurses oder Betriebsstilllegung verloren haben, nach § 40c AFG/DDR in Verbindung mit dem

Einigungsvertrag (vgl. Teil I, Kapitel 1.1.2). Darüber hinaus werden Ausbildungspartnerschaften zwischen Unternehmen in den neuen und alten Ländern dadurch unterstützt, daß die Jugendlichen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Berufsausbildungsbeihilfe erhalten können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97).

Das Ausbildungsplatzförderungs-Programm wird durch vielfältige qualitativ ausgerichtete Initiativen ergänzt.

#### 1. Struktur der Ausbildungsberufe

Mit dem Inkrafttreten des Berufsbildungsgesetzes und der Handwerksordnung wurden alle bisherigen Ausbildungsberufe für die Facharbeiterausbildung der früheren DDR aufgehoben. Neue Ausbildungsverhältnisse dürfen seitdem nur noch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nach Berufsbildungsgesetz und Handwerksordnung abgeschlossen werden.

Zur Vorbereitung auf die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 und zur Erstausrüstung der Ausbildungsbetriebe, berufsbildenden Schulen und der an der beruflichen Bildung beteiligten Institutionen ha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ca. 200 000 Ausbildungsordnungen und Rahmenlehrpläne der wichtigsten Ausbildungsberufe kostenlos zur Verfügung gestellt.

In einigen wenigen Fällen war allerdings eine — zunächst befristete — Wiedereinführung ehemaliger DDR-Berufe als anerkannte Ausbildungsberufe erforderlich, weil es vergleichbare Ausbildungsberufe im alten Bundesgebiet nicht gab und hierdurch eine erhebliche Anzahl von Ausbildungsmöglichkeiten erhalten werden konnten oder weil ein Ausbildungsgang eine besondere regionale Bedeutung hatte.

Im einzelnen handelt es sich um die Berufe:

— Eisenbahner/Eisenbahnerin im Betriebsdienst

Baugeräteführer

--- Holzspielzeugmacher/Holzspielzeugmacherin.

Nach dem neuen Ausbildungsberuf „Eisenbahner im Betriebsdienst“ wird künftig die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bei der Reichsbah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ei den nichtbundes-eigenen Eisenbahnen, z. B. bei Privat- und Werksbahnen sowie gegebenenfalls auch bei der Deutschen Bundesbahn gestaltet.

Auch an den Baumaschinisten, die nach der neuen Ausbildungsordnung „Baugeräteführer“ heißen werden, besteht nicht nur in den neuen Ländern, sondern auch beim Baugewerbe der alten Bundesländer Interesse. Die Ausbildung in diesem Beruf qualifiziert zum Führen von Baumaschinen, z. B. von Kränen oder Hydraulikbaggern im Hochbau oder im Tief- und Straßenbau.

Der Holzspielzeugmacher wurde wegen seiner besonderen traditionellen, 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Bedeutung für das Erzgebirge in die Liste der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 aufgenommen. Inzwischen haben auch schon mehrere Regionen der alten Bundesländer Interesse an dem neuen Ausbildungsberuf bekundet.

Insgesamt bieten die drei neuen Ausbildungsberufe Ausbildungsmöglichkeiten für zur Zeit jährlich ca. 1 000 junge Leute allein in den neuen Ländern. Die entsprechenden Ausbildungsordnungen sind zum 1. August 1991 für das gesamte Bundesgebiet in Kraft getreten.

#### 2. Soforthilfe für Berufs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Berufsschulen müssen auch in den neuen Ländern wesentlich zur Leistungsfähigkeit der Berufsausbildung im dualen System

beitragen und den Ausbildungsbetrieben u. a. ein leistungsstarker Partner sein. Zur Verbesserung ihrer Funktionsfähigkeit und zu ihrer qualitativen Angleichung an die Berufsschul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tellte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ls einmalige Soforthilfe direkt an die einzelnen Berufsschulen zwischen Herbst 1990 und Frühjahr 1991 zur Verfügung

rund 10 Mio. DM für moderne Schulbücher für den Berufsschulunterricht,

rund 18 Mio. DM für Berufsschulausstattungen (moderne Fachliteratur für Lehrer-Handbibliotheken, Kopierer, DV-Geräte für kaufmännischen Unterricht).

Darüber hinaus steht den neuen Ländern seit Frühjahr 1991 im Rahmen des Programms „Aufschwung Ost“ eine 5-Milliarden-Investitionszuschuss zur Verfügung, die für das Schulwesen – und damit auch für die Modernisierung der Berufsschulen – genutzt werden kann und soll.

### 3. Innovationstransfer und Modellvorhaben in der Berufsbildung

Zur raschen Modernisierung der Berufsbildungspraxis in Einrichtungen der Wirtschaft und in beruflichen Schulen der neuen Länder sowie zur zügigen Angleichung an das Qualifizierungsniveau in den alten Bundesländern ha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b 1991 Mittel für das Programm „Innovationstransfer Berufsbildung“ bereitgestellt, mit dem neueste Ergebnisse aus Modellvorhaben und anderen innovativen Quellen in die neuen Länder übertragen und ggf. adaptiert werden sollen. Aus diesem Programm können auch Planungs- und Entwicklungsvorhaben zur Anpassung der Berufsbildung an wirtschafts- und arbeitsmarktstrukturelle Änderungen in den neuen Ländern gefördert werden. Die bisher angelaufenen 15 Vorhaben wurden 1991 mit rund 3 Mio. DM gefördert.

Zur Entwicklung und Erprobung innovativer Lösungsansätze für die qualitative Verbesserung der Berufsbildung werden – wie bishe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auch Ausbildungseinrichtungen der Wirtschaft und berufliche 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in die Förderung von Modellvorhaben einbezogen. Erste Anträge, insbesondere aus dem Bereich des beruflichen Schulwesens der neuen Länder, wurden in der zweiten Jahreshälfte 1991 gestellt.

### 4. Förderprogramm für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In einem Zeitraum von rund 18 Jahren ist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 fast flächendeckendes Netz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aufgebaut worden. Die Förder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at mit rund 2 Mrd. DM maßgeblich dazu beigetragen. In ihren modern ausgestatteten Werkstätten können die mittelständischen Ausbildungsbetriebe zur Ergänz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qualitativ hochwertige Berufsausbildung vermitteln. Betriebsgrößenbedingte Unterschiede der Berufsausbildung werden auf diese Weise weitgehend vermieden.

Mit der Konzeption für die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licher Ausbildungsstätten (siehe BT-Drs. 11/2824) hat sich der Schwerpunkt der Förderung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uf die Modernisierung bestehender Berufsbildungsstätten verlagert. Daneben werden zur Arrondierung des Bestandes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auch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och neu zu schaffende Stätten gefördert. Der Bedarfsentwicklung an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wird auch in Zukunft Rechnung zu tragen sein.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sind zu einem unverzichtbaren Strukturelement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geworden. In den letzten Jahren haben sich die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zunehmend d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geöffnet und stellen in dieser Form der multifunktionalen Nutzung ein Vorbild für vergleichbare, in den neuen Ländern aufzubauende Einrichtungen dar.

Die 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muß allerdings von anderen Grundbedingungen ausgehen. Konnte s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mit funktionierenden, finanziell abgesicherten Selbstverwaltungseinrichtungen der Wirtschaft kooperieren und sich dabei auf das kontinuierliche Mitwachsen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 im Rahmen eines gesamtwirtschaftlichen Wachstumsprozesses einstellen, so gilt für die neuen Länder:

- Ausreichend funktionsfähige Wirtschaftsorganisationen als Partner der Förderung stehen zunächst noch nicht überall zur Verfügung;
- die Förderung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muß in dem Prozeß der Umstrukturierung und Entflechtung der überkommenen großbetrieblichen Wirtschaft dem zunehmenden Qualifikationsbedarf der vielfältig entstehende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 zu entsprechen versuchen;
- de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kommt in den neuen Ländern die besondere Aufgabe zu, den Modernitätsrückstand in allen Wirtschaftsbereichen abzubauen zu helfen.

Dem Aufbau eines Netzes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er sich über einen langen Zeitraum erstrecken und parallel zur quantitativen Entwickl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sangebote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 verlaufen konnte, stehen in den neuen Ländern Anforderungen an die Förderpolitik gegenüber, die durch eine zeitlich komprimierte, umbruchartige Entwicklung einer Gesamtwirtschaft bestimmt werden. Dem daraus folgenden, in einen relativ kurzen Zeitraum gedrängten Förderbedarf muß durch eine Bündelung der administrativen und finanziellen Kräfte der Förderung entsprochen werden. *Handwritten: Förderung*

Die Einrichtung der 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n Berlin angesiedelten Arbeitsgruppe zur Förderung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sowie das zwischen de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vereinbarte gemeinsame Protokoll über das abgestimmte Verfahren zur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können wesentlich dazu beitragen, diesen Anforderungen gerecht zu werden. Hierzu gehört auch, daß die Gesellschaft für Umweltplanung in Stuttgart (GUS) zur Beschleunigung der zur Antragsbearbeitung erforderlichen Gutachten eine Zweigstelle in Weimar eingerichtet hat. *Handwritten: 8*

Als Leitlinie für den mittelfristig zu leistenden Aufbau eines Netzes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sieht die Förderkonzeptio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olgende Stufen vor:

- Die Förderung orientiert sich zunächst an einer regionalen Schwerpunktbildung und konzentriert sich grundsätzlich auf Berufsfelder mit Priorität für das Handwerk, die Bauwirtschaft und die Kleinindustrie; diesen Bereichen kommt bei der Umstrukturierung der Wirtschaft und für den Aufschwung eine Schlüsselfunktion zu (vgl. auch **Kapitel 8**).
- In der zweiten Stufe stellt sich die Förderung auf den Bedarf der Wirtschaft nach Bewältigung der ersten Umstrukturierungsphase ein und bezieht die wichtigen Berufsfelder mit besonderer Bedeutung und Regionen mit weniger dichtem Betriebsbesatz ein.

- In der dritten Stufe sollen Möglichkeiten zur Korrektur an de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der ersten Förderstufe und zur Ausdifferenzierung geboten sowie Neubauten verstärkt in die Förderpolitik einbezogen werden.
- Die vierte Stufe dient der Arrondierung des verfügbaren Netzes a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und verlagert das Schwergewicht der Förderung auf die Modernisierung der bestehenden Stätten.

Diese Stufen stellen eine Orientierung zur möglichen Entwicklung der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dar. Eine Einteilung der Förderung in bestimmte Zeitabschnitte läßt sich daraus nicht ableiten.

Die bisherige Förderpraxis in den neuen Ländern zeigt, wie wichtig die Kooperation dortiger Antragsteller mit einem Partn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ist. Sowohl bei der Beantragung der Fördermittel für den Aufbau und die Einrichtung ein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 als auch für die Organisation, Gestaltung und Führung einer solchen Stätte hat sich die gute Zusammenarbeit zwischen Trägern aus den neuen Ländern mit einer Partnerorganisatio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bewährt. Diese Zusammenarbeit wird in vielen Fällen auf abschbare Zeit noch nicht verzichtbar sein.

#### *Investitionszuschüsse für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zentren (BBZ)*

Der Auf- und Ausbau von BBZ wird mit bis zu 90% der Investitionskosten bezuschußt. Der Eigenanteil soll mindestens 10% betragen. Er kann auch durch Einbringen von Gebäuden und Grundstücken, die im Eigentum der Träger sind oder durch handwerkliche Eigenleistungen (z. B. beim Errichten von Gebäuden und Werkstätten), erbracht werden.

Auch auf Immobilien ehemaliger volkseigener Betriebe und der früheren NVA kann für Zwecke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 zurückgegriffen werden. Hier kann durch Vorstandsbeschluß der Treuhandanstalt vom 5. Februar 1991 wahlweise — soweit Privatisierungsinteressen dem nicht entgegenstehen von folgenden Möglichkeiten Gebrauch gemacht werden:

- Unentgeltliche Übertragung bei dinglich gesicherter Rück-erstattung im Falle späterer anderweitiger Verwendung (ohne Anrechnung auf die zu erbringende Eigenleistung)
- Erbpacht oder Eigentumsübertragung bei Stundung des Kaufpreises bis zu fünf Jahren (Anrechnung als Eigenleistung)
- kurz- und mittelfristige Miet- und Pachtverträge für Räumlichkeiten und Ausstattungen (bis zu fünf Jahren) zu Markt-, aber auch zu Sonderbedingungen.

Es wird den Kammern und Fachverbänden empfohlen, sich zur Überlassung geeigneter Gebäude und Grundstücke mit den jeweiligen Niederlassungen der Treuhandanstalt im Bezirk in Verbindung zu setzen.

Gefördert werden vo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 Ausstattungen bereits bestehender BBZ und Werkstätten oder bisher anderweitig genutzter Gebäude und Räume
- Um- und Ausbau bestehender Einrichtungen oder neu für überbetriebliche Aus- und Weiterbildung übertragene Gebäude
- Neubau von BBZ und größere bauliche Instandsetzungen vorhandener oder übertragener Gebäude.

Um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maßnahmen möglichst schnell in Gang zu setzen, ist es ratsam, sofort mit technischen

Ausstattungen zu beginnen und sie ggf. auch mit kleineren baulichen Veränderungen zu verknüpfen. Daran können sich dann Umbauten und größere bauliche Instandsetzungen anschließen. Erst danach sollte mit dem Neubau von BBZ begonnen werden.

#### 5. Überbetriebliche Lehrlingsunterweisungen (ÜLU)

Zur Anpassung des Ausbildungsstandes der Lehrlinge in den neuen Ländern an den Stand der technischen Entwicklung können Zuschüsse für überbetriebliche Lehrlingsunterweisungen in Berufsbildungszentren für die Grundstufe (1. Lehrjahr) und Fachstufe (2. bis 4. Lehrjahr) in Form von Direktzuweisungen gewährt werden.

Hierdurch soll die Ausbildung im Betrieb wirksam ergänzt, nicht aber ersetzt werden. Die Förderung soll die sonst von den Ausbildungsbetrieben zu tragenden Lehrgangskosten verbilligen und den Lehrlingen einen im Vergleich zu größeren Betrieben wettbewerbsfähigen Ausbildungsstand sichern.

Förderfähig sind Lehrkraftonorare, Material- und Gemeinkosten sowie Unterbringungskosten.

Der überbetrieblichen Lehrlingsausbildung sind die für die einzelnen Ausbildungsberufe des Handwerks gültigen Rahmenlehrpläne des HPI zugrunde zu legen.

Voraussetzung für die Gewährung von Direktzuweisungen ist, daß

- die Ausbildungsinhalte entweder bereits weitgehend den Rahmenlehrplänen bzw. Übungsreihen entsprechen oder diese in möglichst kurzer Zeit erreichen können,
- eine ordnungsgemäße Abwicklung und Abrechnung der Zuschüsse sichergestellt ist (z. B. durch Einrichtungen eines Sonderkontos).

Die Voraussetzungen können dadurch leichter erfüllt werden, daß das Kammerpersonal durch den ZDH systematisch auf die Verwaltung der Mittel vorbereitet wird. Auch können für diesen Zweck Mitarbeiter der Kammern und Fachverbände aus dem bisherigen Bundesgebiet zeitlich befristet in die neuen Länder abgeordnet werden.

#### 6. Ausbildungsberater

Nach Übernahme des Berufsbildungsgesetzes (BBiG) durch die neuen Länder zum 1. September 1990 sind die Ausbildungsinhalte und die Durchführung der Ausbildung entsprechend anzupassen (§ 45 BBiG).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fördert daher den stufenweisen Auf- und Ausbau des Beratungswesens im Ausbildungsbereich.

#### *Abordnung von Ausbildungsberatern aus dem bisherigen Bundesgebiet (1. Stufe)*

Gefördert wird die zeitweise Abordnung von qualifizierten Ausbildungsberatern von Kammern und Verbänden in die neuen Länder. Die Jahrespauschalen (einschließlich Reisekosten) betragen je nach gehaltsmäßiger Einordnung im bisherigen Bundesgebiet

- BAT I b und höher 84 000 DM
- BAT II a/III 72 600 DM
- BAT IV und niedriger 61 400 DM.

Die Förderung wird für Abordnungen bis zu fünf Jahren gewährt und erfolgt für Abordnungen ab 1. September 1990, soweit die

fachlichen Voraussetzungen (Qualifikationsnachweis) hierfür vorliegen. Zeitpunkt des Beginns der Zuschußgewährung ist die Antragstellung.

#### *Zeitweise Abordnung von Ausbildungsberatern und Aufnahme von Assistenten (2. Stufe)*

Die Entsendung von Ausbildungsberater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kann auch zeitlich befristet erfolgen. Hierfür wird eine Aufwandsentschädigung von 300 DM pro Arbeitstag gewährt.

Ebenso kann Personal aus den neuen Ländern zur Aus- und Weiterbildung in Kammern und Fachverbänden entsandt werden. Die Jahrespauschale beträgt 44 000 DM.

#### *Zusätzliche Ausbildungsberater bei Kammern in den neuen Ländern (3. Stufe)*

Für zusätzlich eingestellte Ausbildungsberater in Kammern in den neuen Ländern können Direktzuweisungen gewährt werden, soweit sie ihre fachliche Qualifikation und berufliche Eignung nachweisen.

Für jede Kammer können je nach Anzahl der betreuten Handwerksbetriebe im Kammerbereich bis zu sechs Ausbildungsberater gefördert werden. Der Zuschuß geht von einem Monatsgehalt von 2000 DM einschließlich der Mietkosten für ein Dienst-Kraftfahrzeug im Wert von 18 000 DM bis 20 000 DM aus. Das Kraftfahrzeug ist zum Zeitpunkt der Einstellung des Ausbildungsberaters anzuschaffen und ausschließlich vom Ausbildungsberater zu nutzen.

Folgende Zuschüsse werden gewährt:

1991	30 800 DM
1992	25 600 DM
1993	20 400 DM
1994	15 200 DM
1995	15 200 DM.

## **7. Ausbilder-Eignungsverordnungen**

Um die Ausbildung der Jugendlichen nicht zu gefährden, wurden im Einigungsvertrag vom 31. August 1990 die Ausbilder-Eignungsverordnungen noch nicht auf die neuen Länder übertragen. Die Ausbilder-Eignungsverordnungen stellen sicher, daß die Ausbilderinnen und Ausbilder mit den Grundfragen der Berufsbildung, mit der Planung und Durchführung der Ausbildung, mit den Problemen der Jugendlichen und mit Rechtsfragen vertraut gemacht werden.

Um jedoch künftig Rechtsunsicherheit zu vermeiden und um insbesondere den betriebliche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n in den neuen Ländern eine klare Zukunftsperspektive zu geben, sollen die Ausbilder-Eignungsverordnungen jetzt flexibel eingeführt werden.

Zunächst wurde die Ausbilder-Eignungsverordnung gewerbliche Wirtschaft am 1. Januar 1992 in Kraft gesetzt. Der Hauptausschuß be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at am 26. September 1991 die Einführung dieser Rechtsverordnung einstimmig empfohlen.

Sie sieht besondere Regelungen für diejenigen vor, die vor dem 3. Oktober 1990 ihren Wohnsitz in der früheren DDR hatten. Wer z. B.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und einen Abschluß als Ingenieur- und Ökonompädagoge besitzt und entsprechende Kenntnisse für die Ausbildertätigkeit erworben hat, wird voll als betrieblicher Ausbilder anerkannt. Sie müssen

aber – innerhalb von fünf Jahren – an einem Lehrgang teilnehmen, der in das Berufsbildungsrecht und in die rechtlichen Grundlagen unseres Staates einführt.

Diejenigen Fachkräfte der beruflichen Bildung, die vor dem 31. August 1997 fünf Jahre ohne wesentliche Unterbrechung ausgebildet haben, werden von den zuständigen Stellen auf Antrag vom erforderlichen Nachweis der berufspädagogischen Kenntnisse befreit.

Diejenigen junge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 in den neuen Ländern, die in den nächsten Jahren ihre Facharbeiterprüfung ablegen, müssen dann die Ausbilder-Eignungsprüfung ablegen.

Mit diesen flexiblen Regelungen soll erreicht werden, daß

1. qualifizierte Abschlüsse aus der früheren DDR anerkannt werden,
2. jeder, der heute bereits ausgebildet und sich in den nächsten fünf Jahren dabei bewährt, keine Prüfung mehr ablegen muß und
3. diejenigen, die in den nächsten Jahren die Facharbeiterprüfung ablegen und anschließend Ausbilder werden wollen, jetzt wissen, daß sie eine Ausbilder-Eignungsprüfung machen müssen.

Die anderen Ausbilder-Eignungsverordnungen, so z. B. für die Landwirtschaft, werden ebenfalls entsprechend geändert.

Diese großzügigen Regelungen waren notwendig, damit in den nächsten Jahren genügend Ausbilderinnen und Ausbilder in den neuen Ländern zur Verfügung stehen. Sie werden benötigt, um quantitativ und qualitativ den Facharbeiternachwuchs zu sichern. Jeder Jugendliche hat Anspruch auf eine qualifizierte Berufsausbildung.

## **8. Eintragung der „Meister der volkseigenen Industrie“ in die Handwerksrolle**

In den Industriebetrieben der früheren DDR waren in der Produktion auf der Meisterebene die sogenannten „Meister der volkseigenen Industrie“ (VE-Meister) tätig. Diesen Abschluß gab es in ca. 137 Fachrichtungen; er konnte bis Ende 1991 erworben werden. Vorwiegend rekrutierten sich diese Meister, wie auch die Industriemeist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der Facharbeiterschaft. 1989 waren bei 4,2 Millionen Facharbeitern ungefähr 215 000 Meister in der Volkswirtschaft in der früheren DDR tätig.<sup>1)</sup> Allein 1989 erhielten über 17 000 Absolventen den Meisterabschluß, wobei ca. ein Drittel aller Meisterabschlüsse im Maschinen-, Apparate- und Anlagenbau erfolgte.<sup>2)</sup>

Die Volkswirtschaft der früheren DDR war durch große Produktionsbetriebe gekennzeichnet. Die Wirtschaft soll nun auch in den neuen Ländern von der großbetrieblichen Struktur auf eine vielfältig strukturierte Wirtschaft mit einer Vielzahl kleiner und mittlerer Betriebe umgestellt werden. Die Bundesregierung fördert daher mit Förderungsprogrammen die Existenzgründung von Betrieben insbesondere auch im Handwerksbereich. Da das Handwerk in der früheren DDR sehr stark zurückgedrängt wurde, ist es wichtig, daß auch den Meistern der volkseigenen Industrie die selbständige Ausübung eines Handwerks ermöglicht wird.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hat deshalb auf Grund des Einigungsvertrages (Anlage 1,

<sup>1)</sup> Vgl. Ramlow, E./Scholz, D.: Zur Anpassungsfortbildung von Personal der mittleren/unteren Führungsebene im Produktionsbereich von Industriebetrieben der früheren DDR am Beispiel des Industriemeisters,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4/91, Seite 47

<sup>2)</sup> Ebenda

Kapitel V, Sachgebiet B, Abschnitt III, Nr. n) eine Rechtsverordnung nach § 7 Abs. 2 Handwerksordnung erlassen, durch die die Eintragung von VE-Meistern in die Handwerksrolle auf Grund ihrer VE-Meisterqualifikation erleichtert werden soll. Danach werden VE-Meister, deren Fachgebiet dem einzutragenden Handwerk entspricht, in die Handwerksrolle eingetragen, wenn sie in dem Handwerk eine praktische Tätigkeit von drei Jahren abgeleistet haben oder nach dem 9. November 1989 an einer Weiterbildungsmaßnahme teilgenommen haben, in der einschlägige Fertigkeiten und Kenntnisse vermittelt wurden oder nach dem 31. Dezember 1991 Lehrlinge in einem Beruf ausgebildet haben, dessen Fachgebiet dem zu betreibenden Handwerk entspricht. In der Anlage zu dieser Verordnung sind ca. 90 VE-Meister-Abschlüsse den entsprechenden Handwerken zugeordnet.

Diese Verordnung, die am 1. Januar 1992 in Kraft getreten ist, ist auf die besondere 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zugeschnitten und daher befristet. Anträge auf Eintragung können nur bis zum 31. Dezember 1997 gestellt werden. Die Verleihung des Meistertitels ist mit der Eintragung in die Handwerksrolle nicht verbunden. Streben die VE-Meister den Meistertitel an, um z. B. ihre Wettbewerbschancen zu verbessern, so müssen auch sie die für alle obligatorische Meisterprüfung in allen Teilen ablegen. Die Bundesregierung hat ein gesondertes Förderungsprogramm außerhalb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aufgelegt, das es auch diesem Personenkreis erleichtern soll, sich auf die Meisterprüfung vorzubereiten.

Mit dieser Rechtsverordnung wird für die Kammern und für die VE-Meister eine klare Rechtslage geschaffen und die Etablierung von neuen Handwerksbetrieben in den neuen Ländern gefördert.

### 9. Meistervorbereitungslehrgänge

Zur Beschleunigung des wirtschaftlichen Erneuerungsprozesses in den fünf neuen Ländern und zur Schaffung eines leistungs- und wettbewerbsfähigen Mittelstandes fördert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seit dem 1. August 1991 die Teilnahme an Meistervorbereitungslehrgängen im Handwerk. Die Förderung beschränkt sich auf die Teilnahme an Lehrgängen oder Lehrgangsteilen, die nach dem 1. August 1991 begonnen haben. Dies betrifft auch die Nachqualifizierung von „Meistern der volkseigenen Industrie“ zur Erleichterung von Existenzgründungen im Handwerk. Es werden Teilnehmer gefördert, deren Teilnahme nicht gleichzeitig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bezuschußt wird und die erklären, innerhalb von zwei Jahren nach der Meisterprüfung eine selbständige Existenz zu gründen. Diese Erklärung ist gegenüber dem Veranstalter glaubhaft zu machen.

Durch die Förder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sollen die Lehrgangskosten (Lehrkraft honorare, Sach- und Gemeinkosten — zum Teil Lehrgangsgebühren) verbilligt, bei Bedarf auch die Unterbringungskosten ermäßigt werden.

Die Förderung für jeden förderbaren Teilnehmer und Lehrgangstag beträgt

- 60 DM, wenn der Lehrga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tattfindet,
- 50 DM, wenn der Lehrgang in den neuen Ländern veranstaltet wird,
- 40 DM zusätzlich, sofern am Lehrgangsort eine Unterbringung erforderlich ist. Dies gilt nur, wenn der Lehrgangsort nicht gleichzeitig Wohnsitz des Teilnehmers ist.

Die Lehrgänge können im gesamten Bundesgebiet durchgeführt werden.

### 10. Benachteiligtenförderung

Zur inhaltlichen Gestaltung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nach § 40c AFG und zur fachlich-konzeptionellen Beratung der Träger dieser Maßnahmen beizutragen, sind die Hauptaufgabebereiche von zwei Vorhaben, die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ür den Zeitraum Mai 1991 bis Dezember 1992 fördert. Beide Vorhaben sind als flankierende Maßnahmen zur Benachteiligtenförder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 40c AFG konzipiert. Der Schwerpunkt wird hierbei auf die benachteiligten Jugendlichen, d. h. die originäre Zielgruppe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nach § 40c Abs. 2 AFG und nicht auf die sogenannte erweiterte Zielgruppe nach § 40c Abs. 4 AFG/DDR gelegt.

Ziel der Vorhaben ist zu erreichen, daß in den neuen Ländern ebenso wie in den alten der bewährte Förderansatz der sozialpädagogisch orientierten Berufsausbildung mit in die Ausbildung aufgenommen wird und auf Dauer die erforderliche Unterstützung angeboten werden kann, damit auch benachteiligte Jugendliche eine Ausbildung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erfolgreich abschließen können.

Im Rahmen des Vorhabens „Fachlich-konzeptionelle Unterstützung von Trägern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nach § 40c AFG in den neuen Ländern“ wird jedem der fünf neuen Länder jeweils ein/e Berater/in zur Verfügung gestellt. Aufgabe dieser fünf Berater ist es, das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zugrundeliegende Konzept der sozialpädagogisch orientierten Berufsausbildung bekanntzumachen, da dieses dort bislang nicht praktiziert wurde. Die Träger, die sich längerfristig mit der Ausbildung von benachteiligten Jugendlichen befassen werden, bedürfen gerade in der Anfangsphase eine intensive fachlich-konzeptionelle Unterstützung bei der Gestaltung ihrer Ausbildungs- und Fördermaßnahmen.

Es handelt sich bei dieser Beratung nicht um eine flächendeckende Trägerberatung. Es wird weitgehend Multiplikatorenarbeit geleistet, und es müssen Schwerpunkte gesetzt werden. Hierbei arbeiten die Berater mit den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und der Arbeitsverwaltung sowie den bereits vorhandenen bzw. im Aufbau begriffenen anderen Beratungseinrichtungen auf Landesebene zusammen.

Zu den Aufgaben der Berater gehört es, einzelne Ausbildungsträger in fachlich-inhaltlicher Hinsicht zu beraten. Unterstützt werden sie dabei von einer Gruppe erfahrener Expertinnen und Experten aus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bei spezifischen Problemstellungen als Fachberater/-innen angefordert werden können. Im Rahmen ihrer Multiplikatorenarbeit ist es Aufgabe der Berater, Institutionen und politische Entscheidungsträger, z. B. Arbeits-, Sozial- und Jugendämter, Kreisverwaltungen, Kammern bei Koordinierung ihrer Aktivitäten für benachteiligte Jugendliche zu unterstützen. Insbesondere sollen sie dabei das Konzept der sozialpädagogisch orientierten Berufsausbildung und die Erfahrungen hiermit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vorstellen und erläutern und sich dafür einsetzen, daß im Rahmen der Ausbildungsmaßnahmen nach § 40c AFG auch für benachteiligte Jugendliche genügend Plätze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Die Vermittlung von Partnerschaften und der Aufbau von Kooperationsstrukturen zwischen Ost- und Westträgern gehören ebenfalls zu den Aufgaben der Berater/innen.

Es wird angestrebt, daß jedem Berat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mindestens ein Berater aus den neuen Ländern zur Seite

gestellt wird. Auf mittlere Sicht soll der West-Beraterinsatz durch eigene Beraterkapazitäten in den neuen Ländern ersetzt werden. Diese Erweiterung der Beraterkapazitäten soll über Mittel aus dem FG-Sozialfonds sichergestellt werden.

Im Rahmen des Vorhabens „Inhaltliche Gestaltung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sollen im wesentlichen trägerübergreifende Hilfestellungen für die Ausbildungspraxis erarbeitet, und es soll zur Weiterentwicklung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beigetragen werden. Dies erfordert eine kontinuierliche Prozeßbegleitung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um auftretende Probleme frühzeitig zu erkennen, zu analysieren und Lösungsmöglichkeiten zu erarbeiten. Die hierzu notwendigen Informationen und Kontakte sollen über die enge Zusammenarbeit mit den Berater/innen sowie über kleinere Fachtagungen gewährleistet werden, die mit Trägern und Verantwortlichen in den neuen Ländern durchgeführt werden.

Die Erkenntnisse, die das Projektteam auf diese Weise gewinnt, sollen den Praktiker/innen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Dies kann vor allem in der Form von Handreichungen geschehen, d. h. kurzen, verständlich geschriebenen Texten, die Hinweise, Informationen, Tips und Lösungsmöglichkeiten für den praktischen Umgang mit bestimmten Problemen und Aufgaben der Benachteiligtenförderung geben. Als erste Handreichung ist die Informationsbroschüre „Ausbildung für alle - Förderkonzept für benachteiligte Jugendliche“ Ende 1991 veröffentlicht worden.<sup>1)</sup>

Das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hat 1991 das Bundesjugendplan-Modellprogramm „Arbeitsweltbezogene Jugendsozialarbeit“ um fast 60% (von 13 Mio. DM auf knapp 21 Mio. DM) aufgestockt. Der Zuwachs von rund 8 Mio. DM kommt allein dem modellhaften Aufbau von Beratungs-,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projekten der Jugendberufshilfe und Jugendsozialarbeit in den neuen Ländern zugute. Insbesondere benachteiligten Jugendlichen sollen ganzheitliche lebensweltbezogene Angebote wieder zu tragfähigen Berufs- und Lebensperspektiven verhelfen. Angesichts der großen Umorientierungs- und Anpassungsprobleme können diese Vorhaben nicht flächendeckend, sondern nur beispielgebend für die Entwicklung von zeitgemäßen Strukturen der Jugendsozialarbeit in den neuen Ländern sein.

## 11. Berufliche Weiterbildung

Der wirtschaftliche Strukturwandel in den neuen Ländern stellt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vor besondere Herausforderungen. Die Umstellung der Planwirtschaft auf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modernen Zuschnitts ist dort für mehrere Millionen Erwerbstätige mit der Notwendigkeit verbunden, sehr rasch zusätzliche bzw. gänzlich neue Qualifikationen zu erwerben.

Angesichts dieser Ausnahmesituation wurden die Mittel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für die Förderung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mschulung oder betrieblichen Einarbeitung für 1991 auf ein Volumen von insgesamt rund 6,8 Mrd. DM aufgestockt. Damit wurde rund 900000 Arbeitnehmern der Eintritt in geeignete Qualifizierungsmaßnahmen ermöglicht. Die Relation der schätzungsweise benötigten 4 bis 5 Millionen Anpassungsqualifizierungen einerseits und der durch staatliche Hilfen geförderten Eintritte in entsprechende Maßnahmen andererseits macht jedoch unmittelbar deutlich, daß die Haupt-

last der Anpassung der Qualifikationsstrukturen durch die Betriebe selbst erfolgen muß.

In den neuen Ländern fehlt derzeit noch eine funktionierende Weiterbildungsinfrastruktur. Angesichts der bestehenden Ausnahmesituation und der Notwendigkeit bedarfsgerechter und schnell realisierbarer Angebote beruflicher Qualifizierung geht es darum, Hilfestellungen beim Ausbau eines betriebsnah organisierten Weiterbildungssystems zu geben sowie die Entwicklung zweckmäßiger Weiterbildungsträger- und Weiterbildungsberatungsstrukturen zu unterstützen. Die Initiativen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ichten sich dabei in erster Linie auf subsidiäre Maßnahmen, die als Hilfe zur Selbsthilfe beim Auf- bzw. Ausbau einer marktorientierten pluralen Weiterbildungsstruktur angelegt sind.

Eine im Herbst 1990 in den neuen Ländern durchgeführte Informationskampagne diente dem Ziel, die Weiterbildungsmotivation der Betriebe zu stärken und die Verantwortung der Unternehmen für die Qualifikation der Mitarbeiter zu verdeutlichen.

Zur Unterstützung der Unternehmen in Fragen betrieblicher Qualifizierungs- und Personalentwicklungsstrategien wird in Leipzig und Berlin eine Weiterbildungsberatungs- und Weiterbildungsmanagementgesellschaft erprobt. Zusammen mit der hessischen Wirtschaft wird mit Unterstützun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in unternehmensnahes Bildungswerk in Thüringen aufgebaut, das sich vor allem der kaufmännischen Weiterbildung widmen soll.

Als ergänzender Beitrag zur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sberatung wird die Tätigkeit je eines Weiterbildungsberaters bei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sowie den Handwerkskammern in den neuen Ländern finanziell unterstützt.

Um ausreichend Personal für die verschiedenen Tätigkeitsprofile im Bereich der beruflich-betrieblichen Weiterbildung heranzubilden, werden mit Unterstützun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odellentwicklungen zur Qualifizierung von Multiplikatoren für die Zielgruppen Weiterbildungsberater, -dozenten, Bildungsmanager und Mitarbeiter der betrieblichen Organisations- und Personalentwicklung durchgeführt. Erprobt werden dabei zielgruppenspezifische inhaltliche und methodisch-didaktische Konzepte (u. a. Modulsysteme, Intervallseminare etc.) sowie geeignete organisatorische Formen berufsbegleitender und vollzeitlicher Qualifizierung.

Zusätzlich zu diesen Modellentwicklungen werden in einer wissenschaftlichen Studie bereits realisierte Konzepte der Multiplikatorenqualifizierung der beruflich-betrieb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gesichtet und analysiert. Es sollen Empfehlungen zur Optimierung entsprechender Konzepte unter fachlich-inhaltlichen, methodisch-didaktischen und organisatorisch-strukturellen Gesichtspunkten erarbeitet werden.

Eine unter finanzieller Förderun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itte 1991 in Schwerin eingerichtete Innovations- und Forschungsstelle Beruflich-betriebliche Weiterbildung hat die Zielsetzung, die Möglichkeiten, Bedingungen und Grenzen des gegenseitigen Transfers von Modellen und Method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zwischen alten und neuen Ländern zu prüfen und entsprechende Beratung und Fortbildung von Trägern beruflicher Weiterbildung zu erproben. In enger Abstimmung mit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sollen hier vor dem Hintergrund regionaler Qualifikationsbedarfsanalysen curriculare Defizite vor Ort ermittelt und in ausgewählten Berufsfeldern Vorschläge für möglichst paß-

<sup>1)</sup> Vgl.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usbildung für alle - Förderkonzept für benachteiligte Jugendliche“, Bonn 1991



genaue Brückenkurse zur Qualifikationsanpassung erarbeitet werden, die die vorhandenen fachlichen Eingangsvoraussetzungen angemessen berücksichtigen und einen niveaumäßig adäquaten Abschluß der Qualifizierungsmaßnahme gewährleisten.

Die Umqualifizierung muß parallel zum wirtschaftlichen Genesungsprozeß von den Betrieben in die Hand genommen werden.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at zur Unterstützung dieser Bildungsarbeit in den Betrieben in exemplarischen Branchen Forschungsaufträge vergeben, um Weiterbildungserfahrungen in den Betrieben der neuen Länder kurzfristig zu erfassen, zu analysieren und den frühzeitigen Erfahrungstransfer zu sichern. Damit wird zur Verbesserung vorhandener betrieblicher Qualifizierungsstrategien beigetragen.

In Ergänzung der 1989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rstellten Gutachten des Soziologischen Forschungsinstituts Göttingen und des 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zu Forschungsstand und Forschungsperspektiven im Bereich der betrieblichen Weiterbildung ha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eine Studie zum Stand der Forschung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auf dem Gebiet der neuen Länder in Auftrag gegeben. Mit dieser Studie soll eine Übersicht über Stand und Ergebnisse der Weiterbildungsforschung der letzten Jahrzehnte auf dem Gebiet der neuen Länder geliefert und eine Bewertung hinsichtlich der heute möglichen Nutzung in Theorie und Praxis vorgenommen werden.

In einer weiteren Forschungsstudie wird der Frage nachgegangen, inwieweit bestimmte Bildungsabschlüsse und das System beruflicher Qualifizierung in der früheren DDR die Entwicklung spezifischer beruflicher Mobilitätsprozesse geprägt haben.

Die mit dem Übergang von der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notwendigen Umqualifizierungsstrategien in den neuen Ländern können zu einem Erkenntnismodell für Erfahrungen werden, aus denen auch Rückschlüsse für internationale Qualifizierungsstrategien etwa für die übrigen osteuropäischen Länder ableitbar sind, wobei die in den neuen Ländern vergleichsweise günstigen Rahmenbedingungen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terstützt daher ein interdisziplinär angelegtes Forschungsverbundprojekt, in dem dieser Qualifizierungsprozeß wissenschaftlich begleitet, analysiert und mitgestaltet werden soll.

In den neuen wie alten Bundesländern ist die Qualitätskontrolle beruflicher Weiterbildungsangebote eine bisher ungenügend gelöste Aufgabe. Angesichts der Ausnahme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besitzt diese Frage dort derzeit zusätzliche Relevanz. In ausgesuchten Feldern sollen hier in einem Modellprojekt neue Konzepte der Qualitätskontrolle exemplarisch erprobt werden.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fördert nach dem seit Mitte 1990 laufenden Sonderprogramm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zum raschen Aufbau eines Netzes hochwertiger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269 Modelleinrichtungen (Stand: 1991). Es entstehen damit 40000 Weiterbildungsplätze mit hohem Qualitätsstandard, die größtenteils auch schon in Betrieb genommen sind. Bisher wurden dafür 420 Mio. DM zur Verfügung gestellt. Die Einrichtungen sind über alle 38 Arbeitsamtsbezirke in den neuen Ländern verteilt und umfassen das gesamte berufsfachliche Spektrum.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hat im Rahmen de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eine Vielzahl von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Bildung (Ausbildung, Fortbildung und Umschulung) im Wege de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unterstützt. Im Haushal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tanden für das Jahr 1991 hierfür 180 Mio. DM für die neuen Länder zur Verfügung. Hiervon sind rund 158 Mio. DM abgeflossen. Ziel der Förder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st es, einen beschleunigten und verstärkten Auf- und Ausbau von beruflichen Bildungseinrichtungen zu erreichen, damit die notwendigen Kapazitäten für die Durchführung von beruflichen Weiterbildungsmaßnahmen geschaffen werden.

12. Dem im Rahmen des Strukturwandels in den neuen Ländern erforderlichen Umdenken bei Betrieben und Jugendlichen in puncto Berufsbildung trägt die vom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ter dem Motto „Was machen!“ initiierte Informations- und Motivationskampagne Rechnung.

Als Bestandteil des Gemeinschaftswerks „Aufschwung Ost“ dient diese breit angelegte Kampagne zur Stärkung der Ausbildungsbereitschaft in den neuen Ländern, indem sie lehrstellensuchende Jugendliche mit Ratschlägen und Tips zur Eigeninitiative ermutigt und ausbildungsfähige Betriebe mit Informationen und Hinweisen zu Ausbildungsfragen anregt, Ausbildungsplätze anzubieten.

Die bereits 1991 erfolgreich gestartete Kampagne umfaßt Plakate, Funk- und Fernsehspots, Anzeigen und Beihefter in Zeitungen und Zeitschriften, dabei stehen die an Betriebe gerichtete Broschüre „Aufschwung braucht Ausbildung“ sowie die an Jugendliche gerichtete Broschüre „Jitmachen für die Ausbildung“ im Vordergrund.

Die Kampagne wird 1992 fortgesetzt.

#### 4.1.2 Aktivitä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Berufsberatung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hat Jugendliche und Erwachsene vor Eintritt in das Berufsleben und während des Berufslebens in allen Fragen der Berufswahl und des beruflichen Fortkommens zu beraten (§ 26 AfG). Bei der beruflichen Beratung sollen einerseits die körperlichen, geistigen und charakterlichen Eigenschaften, die Neigung und die persönlichen Verhältnisse des Ratsuchenden berücksichtigt (§ 27 AfG) sowie andererseits Lage und Entwicklung des Arbeitsmarktes und der Berufe einbezogen werden (§ 26 AfG). Unabhängig von der Art der angestrebten Ausbildung – betrieblich oder schulisch – gibt die berufliche Beratung Entscheidungshilfen bei der Berufs- oder Studienwahl.

In den neuen Ländern stellen die neuen Möglichkeiten und Erfordernisse der wirtschaftlichen Neuorientierung sowie der hohe Informationsbedarf große Anforderungen an die Berufsberatung. Die Strukturierung der Ausbildungsplatzangebote von Betrieben zu Gunsten gewerblich-technischer Berufe führte zu Vermittlungsschwierigkeiten von jungen Frauen. Ihnen wurden Möglichkeiten einer Ausbildung auch in gewerblich-technischen Berufen aufgezeigt, und sie wurden motiviert, sich nicht nur mit traditionellen Ausbildungsgängen und Berufen zu befassen.

In den neuen Ländern haben sich im ersten Jahr nach Einführung der Berufsberatung im R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über 280000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in Fragen ihrer beruflichen Zukunft an die Berufsberatung der Arbeitsämter gewandt. Über 145000 dieser Ratsuchenden wollten in eine Ausbildungsstelle vermittelt werden oder haben die Vermittlung in eine Ausbildungsstelle neben anderen Bildungsmöglichkeiten (z. B. weiterer Schulbesuch, berufsbildende Schulen, Hochschulen) in Betracht gezogen. Rund 110000 davon konnten in eine

Berufsausbildungsstelle vermittelt werden, darunter rund 35 000 in eine Berufsausbildung i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gemäß § 40c Abs. 4 AFG/DDR.

In den neuen Ländern konnte insbesondere durch den starken Einsatz des Förderungsinstrumentariums der Berufsberatung die Ausbildungsstellensituation 1991 befriedigend gestaltet werden. Die Angebote in de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unterscheiden sich notwendigerweise deutlich von der Angebotsstruktur der betrieblichen Stellen. Während bei den betrieblichen Stellen Berufe im Bereich Metall, Textil, Landwirtschaft und Bau dominieren, legen die Dienststell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bei der Schaffung von Ausbildungsmöglichkeiten i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besonderen Wert auf Organisation, Verwaltung und Büroberufe, auf Berufe für Warenkaufleute sowie auf allgemeine Dienstleistungsberufe. Damit konnte die Struktur des Ausbildungsangebots den Wünschen der Jugendlichen und der zukünftigen Berufsstruktur in den neuen Ländern angenähert werden, in der Dienstleistungen eine wachsende Bedeutung haben werden.

Darüber hinaus unterstützte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in den neuen Ländern den Aufbau von Berufsbildungswerken für Behinderte ebenso wie die Ausstattung für Träger der Berufsausbildung von benachteiligten Zielgruppen i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 4.1.3 Hilf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st auf Grund seiner vielfältigen Forschungs- und Beratungsaufgaben auf dem Gebiet der beruflichen Bildung auch eine Anlaufstelle für zahlreiche Einrichtungen der Berufsbildungsplanung und -praxis sowie einzelner Ausbilder und Lehrer an berufsbildenden Schulen aus den neuen Ländern.

Zur Herstellung und Förderung von Kontakten zwischen Einrichtungen und Institutionen auf dem Gebiet der beruflichen Bildung wurden ein Adressenwegweiser und ein Glossar wichtiger, zum Teil auch verschieden gebrauchter Begriffe der Berufsbildung erarbeitet und herausgegeben, sowie eine Sonderveröffentlichung, die den bisherigen Facharbeiterberufen der früheren DDR vergleichbare Ausbildungsberuf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ordnet.

Um den Übergang auf das neue Berufsbildungssystem zu unterstützen und um Daten und Arbeitsergebnisse wichtiger Berufsbildungseinrichtungen der früheren DDR zu sichern, arbeitete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mit verschiedenen Einrichtungen zusammen. Mit dem ehemaligen Zentralinstitut für Berufsbildung wurde z. B. gemeinsam eine Erhebung über die Situation der Ausbildungsstätten in der früheren DDR durchgeführt, erste Maßnahmen der Ausbilderqualifizierung angeboten und ein Konzept für die Ausbildung im kaufmännischen Bereich entwickelt. Gleichzeitig gab es auch ein enges Zusammenwirken mit dem Institut für Fachschulwesen in Chemnitz, dem Zentralinstitut für Jugendforschung in Leipzig und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Das 1991 begonnene Forschungsprojekt „Probleme und Entwicklungsperspektive der Kooperation zwischen den Bildungsstätten“ wird in enger Kooperation mit der Humboldt-Universität durchgeführt.

Ferner sind in vielen der von der Bundesregierung, von Verbänden und Gewerkschaften und Parteien gebildeten Gremien und Arbeitsgruppen Vorschläge und Modelle zur Förderung der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eingebracht worden. Im Verlauf der Mitarbeit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in der Unterkommission „Schulische und betrieb-

liche Berufsbildung“ der gemeinsamen Bildungskommission der Bundesrepublik und der früheren DDR wurden unter der Federführ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Vorschläge entwickelt zur

- Bereitstellung und Verwendung von Lehr- und Lernmitteln
- Qualifizierung von Ausbildern und Berufsschullehrern sowie zur
- Berufsausbildung mit Abitur.

Die nachgefragten Dienstleist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sind 1990 dem Bedarf entsprechend weiterentwickelt, gebündelt und zu einem ersten Programm zur Unterstützung der Berufsausbildung in der früheren DDR zusammengefaßt worden. Schwerpunkte des Programms, das vor allem kurzfristig zu realisierenden Maßnahmen enthielt, waren:

- Ausdehnung der gemeinsam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nd dem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urchgeführten Erwerbstätigen-Befragung auf das Gebiet der neuen Länder
- Ermittlung empirischer Grundlagen zur Einschätz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1991 in den neuen Ländern
- Multiplikatorenveranstaltungen zur Ausbildung von Industriekaufleuten und zur Ausbilderförderung
- Infomärkte zur Leittextmethode unter dem Thema „Neue Berufe fordern neue Methoden“
- Mitwirkung bei der Einführung des Ausbildungsberufes „Ver- und Entsorger/in“
- Forschungsauftrag zum Thema „Voraussetzungen für eine umweltgerechte Berufspraxis in der früheren DDR“
- Erläuterungen zu Ausbildungsordnungen
- Forschungsauftrag zur Erhebung des Bildungsbedarfs kaufmännischer Mitarbeiter in der früheren DDR
- Multiplikatorenseminare „Beratung und Verkauf im Einzelhandel der neuen Länder“
- Durchführung mehrerer Seminare mit Berufsbildungsvertretern aus verschiedenen Bereichen über Rahmenbedingungen der dualen Berufsausbildung, Methoden und Medien.

Nach dieser „Ersten Hilfe“ zur raschen Umstellung auf das duale System, stehen derzeit Maßnahmen im Vordergrund, die die Qualität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dauerhaft sichern und verbessern. Hierzu gehören Maßnahmen zur Qualifizierung des Ausbildungspersonals, die Entwicklung von Informationsschriften wie „Ausbildung im Einzelhandel“, „Ausbildungspersonal heute – Veränderungen und Konsequenzen“, „Neuordnung von Berufen, insbesondere Metall“ und „Leittextmethode“.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war ferner beim Aufbau von Ausbilderqualifizierungszentren in Mecklenburg-Vorpommern (Güstrow) und Sachsen-Anhalt (Magdeburg) beteiligt und wird bis zu ihrer Arbeitsaufnahme betreuend tätig sein.

Um den Übergang zur Marktwirtschaft zu unterstützen, soll die notwendige umfassende Neuqualifizierung von Beschäftigten im kaufmännischen Bereich durch ein entsprechendes Projekt unterstützt werden. Ziel ist die Entwicklung und Erprobung eines effektiven Weiterbildungskonzepts zur Qualifizierung kaufmännischer Fachkräfte in der früheren DDR zum/zur Industriefachwirt/in. Dieses Weiterbildungskonzept wurde bereit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valuiert. Auf dem Hintergrund spezifischer Qualifizierungsbedürfnisse in den neuen Ländern werden vorhandene Lehrgangsteile modifiziert, zusätzliche Module entwickelt und methodische Konzepte für eine rasche Umsetzung erarbeitet.

Neue Forschungsprojekte und Vorhaben widmen sich zu einem hohen Anteil mit Fragestellungen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Beispiel dafür ist das Forschungsprojekt „Auszubildende in Deutschland“, in dem Untersuchungen zu Problemen von

- Beruf, Berufsausbildungen und Arbeit für die Lebensplanung der Jugendlichen,
- Berufswahl und Berufszugang,
- Erfahrungen mit Wirkungen der Berufsausbildung auf die Jugendlichen,
- Lebenslage und Perspektiven

durchgeführt und die Untersuchungsergebnisse aus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verglichen werden sollen. Mit dem noch 1991 begonnenen Forschungsprojekt „Berufsausbildung im Übergang — Analyse der Ausbildungsgestaltung in den Ausbildungsstätten der neuen Bundesländer“ — soll der Entwicklungsprozeß in den neuen Ländern begleitet und wesentliche Strukturdaten zur Ausbildungsgestaltung erhoben werden.

#### 4.1.4 Maßnahmen der neuen Länder

Die neuen Länder und Berlin haben in Ergänzung zu den Maßnahmen des Bundes eigene Programme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aufgelegt. Diese Programme, die vor allem auf die Überwindung regional- und gruppenspezifischer Probleme zielen, haben dazu beigetragen, daß 1991 ein ausreichendes Ausbildungsplatzangebot für die Jugendlichen in den neuen Ländern zur Verfügung stand.

Einige Schwerpunkte der Ländertförderung sind nachfolgend dargestellt. Einen detaillierten Gesamtüberblick über die Länderprogramme gibt die **Tabelle 4/1** im Anhang.

##### Berlin

Mit einem Sonderprogramm wurden die „Richtlinien über die Gewährung von 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auf ganz Berlin ausgeweitet. In den östlichen Stadtbezirken fördert das Land Betriebe, die „Konkurslehrlinge“ aufnehmen, mit 75 % der Bruttoausbildungsvergütung zum Zeitpunkt der Übernahme; maximal 8000 DM. Weiterhin ist nach Ausschöpfung der Finanzierungsmittel des Bundes 1991 und 1992 die Förderung zusätzlicher Ausbildungsplätze für jeweils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im Westteil und Ostteil der Stadt vorgesehen. Privaten Unternehmen, die bisher noch nicht ausgebildet haben oder ihre Ausbildungskapazität erhöhen, wird ein Zuschuß für jedes zusätzliche Ausbildungsverhältnis von 5000 DM gewährt. Ebenso werden die Nutzung überbetrieblicher Ausbildungskapazitäten sowie Ausbildungspartnerschaften gefördert.

##### Brandenburg

Jeder neue Ausbildungsplatz in Unternehmen mit über 20 Beschäftigten wird mit 5000 DM gefördert. Mit einem Zuschuß von 75 % der tariflichen oder ortsüblichen Ausbildungsvergütung erhalten solche Unternehmen eine Förderung, die Ausbildungsplätze über ihren unmittelbaren Ausbildungsbedarf hinaus anbieten. Dabei ist der Eigenbedarfsanteil an Ausbildungsplätzen auf 5 % der Beschäftigten eines Unternehmens festgesetzt; für die Landwirtschaft gelten 3 %; bei Ausbildungsplätzen für Mädchen und „Konkurslehrlinge“ entfällt die Prozentgrenze. Außerdem erhalten Unternehmen, die Mädchen in gewerblich-technischen und freien Berufen ausbilden, monatliche Zuschüsse. Finanzielle Förderungen des Bundes werden auf die Landesförderung angerechnet.

Flankierend zu den Maßnahmen des Bundes können Unternehmen mit 21 bis 30 Beschäftigten (Stichtag 1. April 1991) eine einmalige Prämie von 5000 DM pro 1991 abgeschlossenem Ausbildungsvertrag erhalten. Weiterhin werden Unternehmen mit einem Zuschuß von 3000 DM gefördert, die 1990 nicht mehr durch das Vorsorgeprogramm des Bundes unterstützt werden konnten und auch 1991 einen Auszubildenden aufgenommen haben. Voraussetzung dafür ist eine Beschäftigtenzahl von höchstens 30 Mitarbeitern zum Zeitpunkt der Antragstellung. Ferner sind Beihilfen für Jugendliche vorgesehen, soweit die im Zusammenhang mit berufsbildenden Maßnahmen entstehenden Kosten nicht über staatliche Hilfen gedeckt werden können.

##### Sachsen

Mittelständische Betriebe mit maximal 500 Mitarbeitern (Ausnahme Treuhandbetriebe), deren Ausbildungsplätze 10 % der Beschäftigten übersteigt, können im Rahmen der verfügbaren Haushaltsmittel einen Ausbildungsplatzzuschuß in Höhe von 10000 DM erhalten.

##### Sachsen-Anhalt

Mit 3000 DM pro Ausbildungsplatz können Maßnahmen zur Erweiterung des Lehrstellenangebotes gefördert werden. Das gilt für Betriebe, die die Ausbildung von „Konkurslehrlingen“ fortsetzen, die Ausbildungsplätze für Jugendliche schaffen, die ihre Ausbildung bis September 1990 in bisherigen Fachschulberufen begonnen haben und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fortsetzen sowie für Betriebe, die Ausbildungsplätze für Jugendliche mit besonderem Förderbedarf (behinderte, sozial benachteiligte, ausländische Jugendliche) bereitstellen. Der gleiche Förderbetrag ist für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vorgesehen, sofern sie nicht durch das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oder andere Maßnahmen gefördert werden.

##### Thüringen

Ergänzend zur Bundesförderung werden Unternehmen mit einer Betriebsgröße von über 20 bis zu 150 Beschäftigten gefördert. Sie erhalten 3500 DM für männliche und 4000 DM für weibliche Auszubildende, wenn der Anteil der Auszubildenden an den Beschäftigten insgesamt die 5 %-Grenze überschreitet. Ausbildungsverbände können bei Fortführung der Ausbildung von „Konkurslehrlingen“ einen monatlichen Zuschuß zur Ausbildungsvergütung von 300 DM erhalten. Ferner wird die überbetriebliche Ergänzungsausbildung an hochinvestiver Schlüsseltechnik durchgängig für alle Auszubildenden mit EG- und Landesmitteln gefördert.

Über diese Programme hinaus haben die Landesregierungen sowie die Kreise, Städte und Gemeinden der neuen Länder Anstrengungen unternommen, einen ordnungsgemäßen Berufsschulunterricht zu gewährleisten. Sie sind hierbei durch die Investitionshilfe des Bundes für die Kommunen im Rahmen des Gemeinschaftswerkes Aufschwung-Ost unterstützt worden.

Die Länder haben außerdem — zum Teil mit Hilfe des Vorsorgeprogramms nach dem Beschluß des Ministerrates der DDR zur Ausbildungsplatzförderung für Schulabgänger und Lehrlinge im Lehrjahr 1990/1991 sowie zur Vermeidung von Jugendarbeitslosigkeit — Kapazitäten für die schulische Berufsvorbereitung und Berufsgrundbildung von rund 10000 Plätzen

geschaffen. Zusätzliche Angebote sind auch durch die Umorganisation der ehemaligen Fachschulen in Berufsfachschulen, Fachschulen und Fachhochschulen entstanden.

Ein wichtiger Beitrag der Länder waren ferner Schulgesetze, die verhinderten, daß 1991 erneut Abgänger aus der 8. Klasse und früher den Ausbildungsstellenmarkt als Bewerber zusätzlich belasten (1990 rund 35 000 Jugendliche). Alle Schulgesetze der Länder sehen entsprechende Schulpflichtregelungen vor.

Zur weiteren Entlastung des Ausbildungsstellenmarktes haben die Öffnung der gymnasialen Oberstufe und das geänderte Bildungsverhalten der Schüler beigetragen. Zum Schuljahr 1991/1992 sind über 30% der Absolventen der 10. Klasse der ehemaligen Polytechnischen Oberschulen in die neu gegründeten Oberstufen der Gymnasien und Gesamtschulen übergegangen.

#### 4.2 Neuordnung von Ausbildungsberufen

Nach Inkrafttreten der zur Zeit im Erlaßverfahren befindlichen Regelungen wird es 246 neu geordnete Ausbildungsberufe für rund 96% aller Auszubildenden, das sind zur Zeit rund 1,5 Millionen Jugendliche, geben (vgl. **Schaubild 9**). Die Gesamtzahl der Ausbildungsberufe einschließlich der fortgeltenden Altregelungen beträgt zur Zeit 374 (ohne Erprobungsverordnungen) (vgl. **Schaubild 10**).

Im Jahre 1991 bzw. Anfang 1992 wurden 21 Ausbildungsberufe für ca. 89 000 Auszubildende geregelt, die überwiegend mit Beginn des Ausbildungsjahres 1992 zum 1. August 1992 in Kraft treten - einschließlich der Berufe, über die bereits im Berufsbildungsbericht '91 (vgl. **Kapitel 4.1.1**) berichtet wurde - (vgl. **Übersicht 70**).

Schaubild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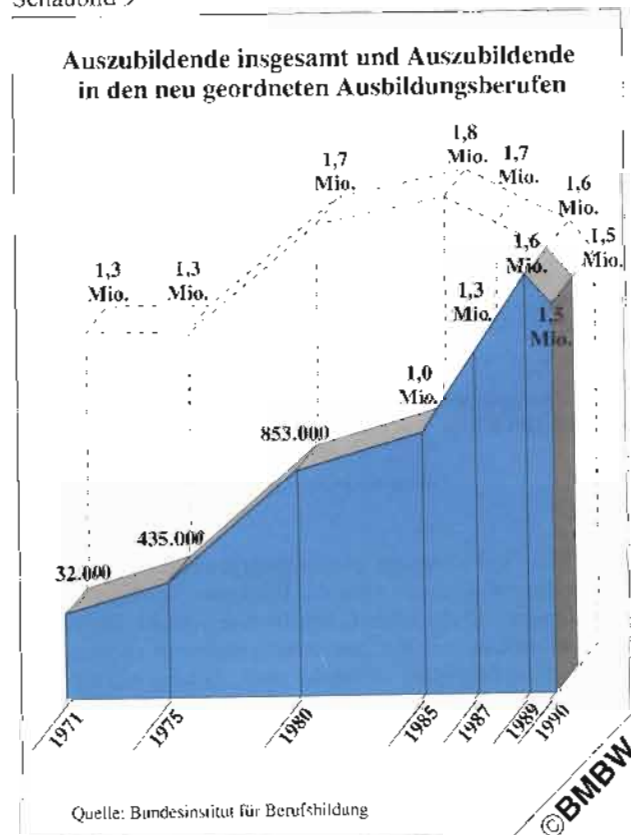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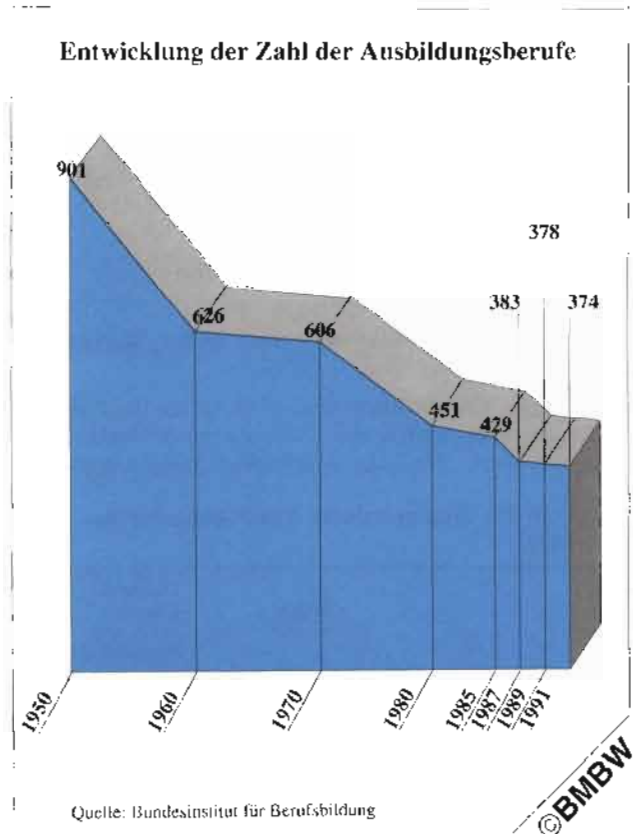


Schaubild 10



Bereits zum 1. August 1991 in Kraft getreten sind die Berufe Gerüstbauer/Gerüstbauerin, Flachglasmechaniker/Flachglasmechanikerin, Papiermacher/Papiermacherin, Bürokaufmann/Bürokauffrau, Kaufmann/Kauffrau für Bürokommunikation, Molkereifachmann/Molkereifachfrau, Wasserbauer, Fachkraft für Lagerwirtschaft sowie die Berufe

- Eisenbahner/Eisenbahnerin im Betriebsdienst
- Holzspielzeugmacher/Holzspielzeugmacherin und
- Baugeräteführer;

hierbei handelt es sich um die Wiederanerkennung ehemaliger DDR-Berufe (vgl. im einzelnen die Ausführungen zu Kapitel 4.1.1 — 1. Struktur der Ausbildungsberufe).

Zukünftig wird neben der Überarbeitung noch bestehender, vor dem Berufsbildungsgesetz von 1969 bereits erlassener „Altregelungen“ die Novellierung der in den 70er Jahren neu geordneten Ausbildungsberufe immer mehr an Bedeutung gewinnen. Das gilt besonders auch für die großen kaufmännischen Berufe. Für sie und andere ist auf Grund der schnellen technischen und wirtschaftlichen Weiterentwicklung eine „zweite Modernisierungswelle“ zu erwarten.

#### Umsetzung neuer Ausbildungsordnungen in die Ausbildungspraxis

Zwecks Erleichterung der Umsetzung neuer Ausbildungsordnungen in die betriebliche Praxis werden 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vielfältige Umsetzungshilfen erarbeitet. Dazu gehören insbesondere auch die „Erläuterungen zu neuen Ausbildungsordnungen“, die inzwischen für die folgenden Ausbildungsberufe vorliegen:

Durchschnitt auf gut 75000 DM pro Ausbildungsplatz. Zum Vergleich: 1989 lagen diese Kosten bei 72000 DM.

Die monatliche Ausbildungsvergütung beträgt im Durchschnitt derzeit 1096 DM (1989: 1044 DM). Die Anfangsgehälter nach Abschluß der Ausbildung belaufen sich im Schnitt auf 3681 DM — 1989 waren es 3408 DM.

Die große Attraktivität der Sonderausbildungsplätze wird an der hohen Bewerberzahl deutlich. Sie liegt bei 31 Meldungen pro Platz. Mit 34 Bewerbern pro angebotenen Platz ist der Andrang in den kaufmännisch-betriebswirtschaftlichen Ausbildungsgängen am stärksten; mit 23 Interessenten im Ingenieurbereich am geringsten.

Kriterien für die Auswahl sind Zeugnisse, insbesondere Tests und Einstellungsgespräche. Die Betriebe wollen dabei vor allem erfahren, wie es um Leistungsbereitschaft, Teamfähigkeit, Selbständigkeit, Flexibilität, Ausdauer und Urteilsfähigkeit der künftigen Mitarbeiter bestellt ist.

Die Sonderausbildungsgänge sind derzeit noch eine Spezialität der alten Bundesländer. Doch wird inzwischen auch in den neuen Ländern geprüft, ob die betrieblichen und institutionellen Voraussetzungen für diese Form der Abiturientenausbildung gegeben sind.

#### 4.6 Zusammenarbeit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Deutsche Forschungseinrichtungen arbeiten auf dem Gebiet der betrieblichen Berufsbildung auf vielfältige Weise zusammen.

##### *Berufsbildungsforschungsnetz in Deutschland*

Mit der Kooperations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 dem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AB) und der Kommission für Berufs- und Wirtschaftspädagogik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DGfE) wurde im Juni 1991 die Arbeitsgemeinschaft „Berufsbildungsforschungsnetz“ (AG BFN) gegründet.

Ziel der Arbeitsgemeinschaft ist es, auf der Grundlage einer verbesserten gegenseitigen Information die Berufsbildungsforschung durch Austausch von Forschungsergebnissen, Daten und Dokumentationen zu fördern. Die Arbeitsgemeinschaft strebt die Einrichtung einer umfassenden „Forschungsdokumentation Berufsbildung“ und Literaturdokumentation an. Diese Dokumentationen sollen allen Institutionen und Personen, die auf dem Gebiet der Berufsbildungsforschung tätig sind, zugänglich sein.

Mitglied in der Arbeitsgemeinschaft können alle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an Universitäten sowie außeruniversitäre Einrichtungen werden, die Berufsbildungsforschung betreiben.

Zur Diskussion über den Stand der Arbeit im Rahmen des „Berufsbildungsforschungsnetzes“ wird die Arbeitsgemeinschaft voraussichtlich alle zwei Jahre ein „Forum Berufsbildungsforschung“ veranstalten, das möglichst in Zusammenhang mit einer wissenschaftlichen Fachtagung durchgeführt werden soll.

##### *Zusammenarbeit der Berufsbildungsinstitute deutschsprachiger Länder*

Das dritte Kontaktseminar der Berufsbildungsinstitute der drei deutschsprachigen Länder<sup>1)</sup> fand 1991 zum Schwerpunkt „Weiterbildungsforschung“ in Zollikofen (Schweiz) statt.

In diesem Seminar wurden vor allem die Situation und der Stand der Weiterbildungsforschung in den beteiligten Ländern diskutiert, wobei von allen Beteiligten der große Mangel an statistischen Grundlagen in diesem Forschungsbereich als vorrangiges Forschungsdefizit genannt wurde.

Das Seminar 1992 wird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organisiert und durchgeführt werden und die Herausforderungen an das duale System zum Thema haben. Es ist vorgesehen, zu diesem Seminar auch Vertreter aus den osteuropäischen Staaten einzuladen.

##### *Zusammenarbeit mit Landesministerien/Landesinstitute*

Die Kooperation der Lernorte Betrieb und Schule ist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das Funktionieren des dualen Systems. Angesichts der in den neu geordneten Berufen der letzten Jahre geforderten Facharbeiter- und Fachangestelltenqualifikationen, die insbesondere selbständiges Planen, Durchführen und Kontrollieren einschließen, gewinnt diese Kooperation zunehmend an Bedeutung. Es müssen nicht nur die Fragen der direkten Zusammenarbeit zwischen einzelnen Betrieben und Schulen geklärt, sondern auch grundsätzliche lernorganisatorische und methodische Fragen gelöst werden.

Dies erfordert einen regelmäßigen Informationsaustausch mit den für den Unterricht an berufsbildenden Schulen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und deren Landesinstituten. Dieser Informations- und Erfahrungsaustausch soll 1992 zwischen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nd einzelnen Ländern (Bayern, Nordrhein-Westfalen, Niedersachsen) beginnen und danach ausgeweitet werden.

Ergänzend sind gemeinsame Modellvorhaben und Projekte geplant, um die Kooperation der Lernorte zu untersuchen und zu verbessern.

##### *Zweiter Fachkongreß 1992 „Neue Berufe — neue Qualifikationen“*

Auf dem 1. Fachkongreß de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zum Thema „Neue Berufe — neue Qualifikationen“ wurden 1988 unter Beteiligung nationaler und ausländischer Berufsbildungs- und Forschungseinrichtungen erstmalig Fragen der Umsetzung der neuen Ausbildungsordnungen in die Praxis umfassend diskutiert.

Der 2. Fachkongreß findet 1992 zum Thema „Entwicklungstendenzen und Lösungswege für Berufsbildungspraxis in Ost und West“ statt. Anhand praktischer Fälle und Erkenntnisse sollen Fragen der weiteren Umsetzung der neuen Ausbildungsordnungen in die Praxis erörtert werden. Ausgehend von den zwischenzeitlich vorliegenden Erfahrungen in den Betrieben, Kammern und Berufsschulen sollen beispielhaft Lösungen zur Umsetzung der neuen Ausbildungsordnungen aufgezeigt werden.

Die Situation und Weiter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wird dabei ein wichtiger Diskussionspunkt für den gesamten Fachkongreß sein. Ferner gewinnen mit der bevorstehenden Verwirklichung des gemeinsamen Binnenmarktes die europäischen Qualifizierungsaspekte zunehmend an Gewicht.

<sup>1)</sup> Schweizerisches Institut für Berufspädagogik/Zollikofen, Bundesamt für gewerbliche Wirtschaft/Bern; Österreich: Institut für Berufsbildungsforschung der Wirtschaft/Wien, Österreichisches Institut für Berufsbildungsforschung/Wien; Deutschland: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rhofft werden von der Veranstaltung Klärungen, Kritik und Probleme sowie die Ermittlung des Forschungsbedarfs der 90er Jahre zur Thematik der neuen Qualifikationen und neuen Berufe.

*Deutsches Institut für Fernstudien  
an der Universität Tübingen*

Auf der Basis der Kooperationsvereinbarung 1989 zwischen dem Deutschen Institut für Fernstudien und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soll die Weiterbildungsforschung durch wechselseitige Unterstützung und Kooperation und durch einen intensiven Informationsaustausch gefördert werden.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In der von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1990 herausgegebenen Denkschrift zur „Berufsbildungsforschung an den Hochschu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rden zahlreiche Problemfelder benannt, die erforscht und durch gezieltere Reformvorschläge einer zukunftsbezogenen Lösung zugeführt werden sollen<sup>1)</sup>.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wird die Konkretisierung dieser Problemfelder begleiten und unterstützen.

Im Rahmen des Schwerpunktprogramms „Lernen und Arbeiten in der beruflichen Grundbildung — am Beispiel der kaufmännischen Erstausbildung“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soll der Versuch unternommen werden, zum einen die gegebenen Lehr-Lern-Prozesse zu beschreiben und zum anderen theoretisch begründete Alternativen zu entwerfen und zu überprüfen. Da die Forschung in „natürlichen Situationen“ durchzuführen ist, werden zugleich vorliegende Theorien zum Lehren und Lernen, die vielfach unter Laborbedingungen entwickelt wurden, neuartigen Tests unterworfen.

## 5. Personengruppen, die besonderer Förderung bedürfen

### 5.1 Entwicklung berufsvorbereitender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Über die v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geförderten, nicht den Schulgesetzen der Länder unterliegende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wurde ausführlich im Berufsbildungsbericht 1989<sup>2)</sup> berichtet.

Diese Maßnahmen im Bereich der Berufsberatung sowie d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beratung wurden von der Bundesanstalt auch im Berichtsjahr 1991 mit gleicher Zielsetzung und Aufgabenstellung gefördert. Sie gewinnen zunehmend an Bedeutung in den fünf neuen Ländern als ein qualifiziertes Instrument bei der Bewältigung der Probleme auf dem dortigen Ausbildungsstellenmarkt.

Zur Entwicklung der Maßnahmen gegenüber dem Berichtsjahr 1990 vgl. **Übersicht 78** und **Übersicht 79**.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89, Seite 113 ff.

<sup>2)</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89, Seite 113 ff.

### Übersicht 78: Zahl der Teilnehmer a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Berufsberatung im alten Bundesgebiet 1990 und 1991

Art der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	1990	1991
Grundausbildungslehrgang (G)	6989	7107
Förderungslehrgang	16987	17555
Informations- und Motivationslehrgang (IM)	272	504
Lehrgang bzw. Kurs gem. § 40b AFG (Vorbereitungslehrgänge zum nachträglichen Erwerb des Hauptschulabschlusses, allgemeinbildende Kurse zum Abbau beruflich schwerwiegender Bildungsdifzite)	43	44
Spezielle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im Rahmen der beruflichen Rehabilitation	11088	noch nicht ausgewertet
<b>Insgesamt</b>	<b>35079</b>	<b>25210</b>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Seite 92f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 5.2 Förderung der Berufsbildung Behinderter

Die Bundesregierung setzt sich für eine bestmögliche berufliche Qualifizierung Behinderter unter Berücksichtigung des individuellen Leistungsvermögens ein, wobei das Bildungschancen auch für weniger Leistungsfähige einschließt.

#### 5.2.1 Erstmalige berufliche Eingliederung von Behinderten

##### Zahlenmäßige Entwickl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ach der 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über die berufliche Rehabilitation haben im Berichtsjahr 1990/91 13672 Behinderte eine Ausbildung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nach §§ 25 Berufsbildungsgesetz (BBiG), Handwerksordnung (HwO)) mit Unterstütz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begonnen und 4077 begannen eine Ausbildung in Sonderform nach §§ 48 BBiG/42b HwO. Ausbildungsgänge nach §§ 48 BBiG/42b HwO berücksichtigen die besonderen Verhältnisse der Behinderten.

### Übersicht 79: Zahl der Teilnehmer an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n im Bereich d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beratung im alten Bundesgebiet 1990 und 1991

Art der berufsvorbereitenden Bildungsmaßnahme	1990	1991
Vermittlung/Erweiterung beruflicher Kenntnisse (J 4 – J 7)	11993	9754
Arbeiten und Lernen (J 3)	7219	6676
Lehrgang bzw. Kurs gem. § 40b AFG (Vorbereitungslehrgänge zum nachträglichen Erwerb des Hauptschulabschlusses, allgemeinbildende Kurse zum Abbau beruflich schwerwiegender Bildungsdifzite, J 8 – J 9)	5074	4430
<b>Insgesamt</b>	<b>24286</b>	<b>20860</b>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Seite 92f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Eine weitere Möglichkeit, auf die Qualität der Weiterbildung Einfluß zu nehmen, besteht in der Stärkung des kritischen Nachfragebewußtseins und -verhaltens der (potentiellen) Bildungsnachfrager. Hier dürfte ein großes Aufgabenfeld der Informationsvermittlung und -beratung liegen. Zu diesem Zweck haben einige Bundesländer — regionale oder kommunale — Beratungsstellen eingerichtet. Die Stiftung Warentest wird sich der vergleichenden Bewertung von Weiterbildungsangeboten annehmen.

Auch die „Konzertierte Aktion Weiterbildung“ (KAW) hat sich eingehend mit Fragen der Transparenz und Qualität der Weiterbildung befaßt. So stand die Forderung nach Sicherung der Qualität der Weiterbildung beim zweiten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im April 1990 in Potsdam im Vordergrund. Auf Verbesserung der Transparenz und Qualität der Weiterbildung zielt auch die Empfehlung der KAW zur inhaltlichen Gestaltung von Weiterbildungszertifikaten.

## 6.8 Aspekte der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Nach vorsichtigen Schätzungen ist bei einem Vergleich der Beschäftigungsstrukturen zwische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den neuen Ländern davon auszugehen, daß mehr als 4 Millionen Personen sich in den neuen Ländern kurz- und mittelfristig beruflich neu orientieren müssen. Dies bedeutet Weiterqualifizierung oder auch vollständige Neuausbildung.

Diese notwendige Nachqualifizierung umfaßt einerseits den Erwerb neuen Wissens und Könnens, andererseits neue Verhaltensanforderungen. Neues Wissen und Können sind erforderlich, weil sich die Berufsstrukturen in den neuen Ländern rasch verändern werden. Ähnlich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wird etwa der gesamte Dienstleistungsbereich stark expandieren, Tätigkeiten im landwirtschaftlichen Bereich, aber auch in der industriellen Produktion, werden dagegen vergleichsweise zurückgehen.

Die individuellen Voraussetzungen, diese Weiterbildungsaufgabe zu erfüllen, sind in den neuen Ländern gut, denn die Weiterbildungsmotivation der Bürger ist insgesamt ausgeprägt. Was in den neuen Ländern noch häufig fehlt, ist eine auf diese „Weiterbildungsausnahmesituation“ zugeschnittene Weiterbildungsstruktur und Weiterbildungsberatungsstruktu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sstruktur ist maßgeblich durch das Arbeitsförderungsgesetz geprägt; dieses Arbeitsförderungsgesetz gilt mit Weiterungen auch in den neuen Ländern. Mit den verfügbaren Mitteln für das AFG (rund 6,7 Mrd. DM für die neuen Länder) konnten 1991 fast 900 000 Qualifizierungsmaßnahmen durchgeführt werden. Dies reicht jedoch nicht aus.

Der große Weiterbildungsbedarf kann auch nicht allein durch Weiterbildungsexporte aus den alten in die neuen Länder abgedeckt werden. Angesichts dieser Gesamtlage wird deutlich, welche entscheidende Weiterbildungsfunktion die Betriebe in den neuen Ländern einnehmen müssen.

Die vielen Aktivitäten zum Aufbau eines pluralen, differenzierten Weiterbildungsangebots in den neuen Ländern müssen deshalb auch darauf gerichtet sein, die Bereitschaft und Fähigkeit der Betriebe zu entwickeln und zu verbessern, ihre Qualifikationsbedürfnisse so weit als möglich selbst zu befriedigen.

Hierfür sind unter Berücksichtigung vorhandener Qualifikationspotentiale geeignete Voraussetzungen zu schaffen, die auch eine Gleichstellung entsprechender Abschlüsse einschließen.

## 6.8.1 Ausbildungsabschlüsse von Meistern der volkseigenen Industrie (VE-Meister)

### *Qualifizierungsangebote im Industriebereich*

Nach dem Einigungsvertrag Artikel 37 Absatz 1 Satz 1(4) gelten die in der früheren DDR erworbenen Meisterabschlüsse in den neuen Ländern weiter. Nach Artikel 37 Absatz 1 Satz 3 hat ein Antragsteller die Möglichkeit, nicht nur die Gültigkeit seines Meisterabschlusses, sondern auch die Gleichwertigkeit mit einem entsprechenden Industriemeisterabschluß in der Bundesrepublik feststellen zu lassen. Dabei wird großzügig verfahren: Die zuständigen Stellen, die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gehen von vergleichbaren Abschnübniveaus zwischen VE-Meistern und Industriemeistern aus. Die Gleichstellung erfolgt auf der Grundlage eines Zuordnungskatalogs, der vom Deutschen Industrie- und Handelstag zusammen mit den Gewerkschaften und unter Beteilig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arbeitet worden ist.

Dieses Anerkennungsverfahren wird von den Betroffenen als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en Einstieg in das neue Beschäftigungssystem angesehen und begrüßt.

Obwohl der Aufbau der Meisterqualifizierung und die Fächerstruktur im fachrichtungsübergreifenden und im fachspezifischen Teil der Meisterausbildung prinzipiell vergleichbar sind<sup>1)</sup>, ist es auf dem Hintergrund der wirtschaftlichen Neuorientierung in den neuen Ländern auch für VE-Meister wichtig, ihr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den neuen Anforderungen im Industriemeisterbereich anzupassen. VE-Meistern sollten deshalb Weiterbildungsangebote als Zusatzqualifikation insbesondere mit fachrichtungsübergreifenden Lernzielen unterbreitet werden. Die Angebote sollten auch den Erwerb der Befähigung zur Ausbildung von Auszubildenden durch eine berufs- und arbeitspädagogische Fortbildung entsprechend der Ausbilder-Eignungsverordnung einschließen.

Ferner erschiene es sinnvoll, VE-Meister mit neuen fachrichtungsspezifischen Normen und gesetzlichen Vorschriften vertraut zu machen.

### *Eintragung von VE-Meistern in die Handwerksrolle*

Nach § 1 Abs. 1 der Handwerksordnung ist der selbständige Betrieb eines Handwerks nur den in der Handwerksrolle eingetragenen natürlichen und juristischen Personen gestattet. Der Regelfall ist die Meisterprüfung im Handwerk als Voraussetzung für die Eintragung. Dieser Fall trifft auf VE-Meister nicht zu, da sie keine handwerkliche Meisterprüfung abgelegt haben. Um möglichst vielen Existenzgründern auch aus der Gruppe der VE-Meister den Zugang zum Handwerk zu eröffnen, wurde durch Rechtsverordnung vom 6. Dezember 1991 auf der Grundlage des Einigungsvertrages die Eintragung von VE-Meistern in die Handwerksrolle erleichtert.<sup>2)</sup>

## 6.8.2 Qualifizierungsbedarf im kaufmännischen Bereich

Zur Vorbereitung kaufmännischer Fortbildungsmaßnahmen in den neuen Ländern hat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anhand von Lehrplanvergleichen und vier Fallstudien in exemplarisch ausgewählten Industrie- und Handelsbetrieben in der

<sup>1)</sup> Vgl. dazu im einzelnen Kapitel 3.4

<sup>2)</sup> Weitere Einzelheiten dazu unter Kapitel 4.1.1

früheren DDR den Bildungsbedarf für kaufmännische Fachkräfte untersucht.<sup>1)</sup> Die Ergebnisse dieser Arbeiten unterstreichen, daß während der vorausgegangenen Planwirtschaftsphase die für marktwirtschaftliche Unternehmensführung wesentlichen Funktionsbereiche in den dortigen Betrieben überhaupt nicht oder nur andeutungsweise existierten.

Die Berufe in Wirtschaft und Verwaltung waren eine Domäne der Frauen. Fast ausschließlich wurden kaufmännische Abschlüsse von Frauen erworben. Relativ selten jedoch stiegen Frauen in höhere Leitungsfunktionen auf. Ihre Aufgaben lassen sich eher als Sachbearbeiterinnen-, Kontoristinnen- bzw. Sekretariatsarbeiten, gegebenenfalls als die einer Wirtschaftlerin beschreiben. Höhere Leitungsaufgaben im ökonomischen Bereich wurden meistens von Männern wahrgenommen, obgleich diese überwiegend in fremden, häufig technischen Fachgebieten ausgebildet waren.

Die Profile der kaufmännischen Ausbildungsberufe waren in der früheren DDR zum Teil sehr eingeschränkt angelegt. Sie orientierten sich an den planwirtschaftlich orientierten kaufmännischen Funktionen im Betrieb. Der volkswirtschaftliche Umstrukturierungsprozeß führt in den neuen Ländern zur Neugestaltung der gesamten kaufmännischen Qualifikationsstruktur. Dabei ist der Bedarf nach kaufmännischen Qualifikationen in der Industrie besonders umfassend. Defizite an kaufmännischen Führungsqualifikationen bestehen vor allem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d. h. an Qualifikationen im Bereich der Unternehmensleitung, Personalführung und Organisation.

Die Hauptschwerpunkte für die Neuqualifizierung liegen in den Bereichen Rechnungs- und Finanzwesen, Marketing, Verkaufsförderung und Preispolitik, Organisation und EDV, Wirtschaftsrecht, Fremdsprachen und vor allem Unternehmens- und Personalführung.

Eine Qualifizierung in diesen fachlichen Bereichen führt nur dann zum Erfolg, wenn die durch das frühere Planwirtschaftssystem geprägten Verhaltensweisen der kaufmännischen Mitarbeiter im Hinblick auf eine neue Bewußtseinshaltung verändert werden. Die Mitarbeiter müssen sich innerhalb der für sie neuen Gesellschaftsordnung und deren Maßstäben orientieren, sie müssen lernen, sich im Beschäftigungssystem zu behaupten, sie müssen insbesondere zu mehr Eigeninitiative und Verantwortungsbereitschaft befähigt werden. Erst auf der Grundlage solcher fachunabhängigen Qualifikationen lassen sich die erworbenen Fachqualifikationen in berufliche Handlungskompetenz umsetzen.

Das Bildungsinteresse der in der früheren DDR kaufmännisch Ausgebildeten ist überwiegend auf den Erwerb abschlußbezogener Qualifikationen gerichtet, die eine breite Verwertung versprechen. Dies kommt dem wirtschaftlichen Qualifikationsbedarf entgegen. Insbesondere müssen die in der früheren DDR bislang fehlenden kaufmännischen Fortbildungsberufe durch geeignete Übergangsmaßnahmen zugänglich gemacht werden.

Wichtigste Voraussetzung für die Bewältigung dieses Anpassungsprozesses sind die rasche Bereitstellung geeigneter Lehrgangsangebote und die Gewinnung von Lehrkräfte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Allerdings können d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orhandenen Fortbildungsmaßnahmen auf

Grund der völlig anderen Vorbildung, Vorerfahrung und Bewußtseinsprägung der Teilnehmer nicht einfach übernommen, sondern müssen den neuen Zielgruppen angepaßt werden. Von diesen Erkenntnissen ausgehend bereitet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jetzt die Entwicklung von Konzepten zur Anpassung bestehender kaufmännischer Fortbildungsmaßnahmen vor.

### 6.8.3 Weiterbildung von Fach- und Führungskräften in den sozialen Diensten der neuen Länder

Die gegenwärtige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zeigt, daß die Realisierung der Sozialunion in ganz Deutschland nicht allein von der Angleichung der sozialen Sicherungssysteme, sondern in gleichem Maße von der Angleichung des Leistungsniveaus der sozialen Dienste abhängt. Vor dem Hintergrund der expansiven Entwicklung der sozialen Dienst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und den damit verbundenen Anforderungen an Organisation und Verwaltung sozialer Einrichtungen — wird für die neuen Länder eine entsprechende Qualifizierung von Fach- und Führungskräften dringend notwendig. Gleichzeitig werden in den neuen Ländern neue Strukturen sozialer Sicherung und Hilfe aufgebaut. Überwiegend fehlen aber noch leistungsfähige öffentliche und freie Träger, geeignete Finanzierungswege, kommunale Strukturen mit gesicherter Finanzierung und qualifiziertem Verwaltungsdienst.

In der früheren DDR ist erst Ende der 70er Jahre mit einer spezifischen Ausbildung auf dem Gebiet der sozialen Dienste begonnen worden. Eine reguläre Fachschulausbildung „Sozial-/ Gesundheitsfürsorger/in“ wurde 1980 eingerichtet. Es gab Ende 1988 in der früheren DDR 652 Sozialfürsorger/innen; Gesundheitsfürsorger/innen werden mit 6061 ausgewiesen<sup>1)</sup>. Sie sind die einzigen vorhandenen Fachkräfte, auf die soziale Dienste in den neuen Ländern zurückgreifen können.

An Regelungen zur Nachqualifizierung bzw. Gleichstellung der Fürsorger mit dem staatlich anerkannten Sozialarbeiter wird gearbeitet. Im Land Thüringen werden Fürsorger/innen formal mit dem staatlich anerkannten Sozialarbeiter gleichgestellt; Brandenburg und Berlin setzen zum Beispiel eine berufsbegleitende Nachqualifizierung im Umfang von ca. 120 bzw. 275 Doppelstunden zur Gleichstellung voraus.

Die bereits angelaufenen Nachqualifizierungen in Berlin und Brandenburg haben gezeigt, daß sie zwar eine Grundlage für das Arbeiten unter den neuen Bedingungen darstellen, aber nicht ausreichen, um Leitungsfunktionen mit praxisorientierten fachlichen, kommunikativen, sozialadministrativen und organisatorischen Kenntnissen, d. h. Managementkenntnissen, erfüllen zu können.

Die Leitungsanforderungen im Bereich der Organisation und Verwaltung sozialer Einrichtungen machen arbeitsfeldübergreifende und vernetzende Tätigkeiten notwendig. Ferner verstärken begrenzte finanzielle Rahmenbedingungen den Trend zu größerer Effizienz sozialer Dienstleistungen. Schließlich wird angesichts der demografischen Entwicklung eine Qualitätssteigerung und Professionalisierung der sozialen Arbeit erforderlich.

Vor diesem Hintergrund wird für die neuen Länder eine gezielte Weiterbildung für Fach- und Führungskräfte in sozialen Diensten notwendig. Die Fortbildung soll anwendungsbezogenes Wissen

<sup>1)</sup> Wittig, Angelika: Qualifizierung für die Marktwirtschaft — Zum Bildungsbedarf kaufmännischer Mitarbeit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lin 1991;

Dr. Blötz, Ulrich: Standpunkte zur Vorbereitung der Evaluierung des Fortbildungsmodells „Industriefachwirt/Industriefachwirti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lin 1991

<sup>1)</sup> Vgl. Perspektiven professionelle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 Memorandum zur Weiterentwicklung der Fachhochschulausbildung in Berlin im Zusammenhang mit der deutschen Einigung. Fachhochschule fü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 Berlin, Oktober 1990.



des Berufsfeldes „Soziale Arbeit“ vermitteln, das in Verbindung mit bestehender Fachkompetenz zugleich Chancen für einen neuen beruflichen Einstieg in Führungspositionen bietet.

1992 laufen in Kooperation mit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Modellmaßnahmen für drei Zielgruppen an, die eine Grundlage zur Entwicklung eines Qualifikationsprofils und Musterkonzepts einer berufsbegleitenden Fortbildungsmaßnahme zum/zur „Staatlich geprüften Leiter/in in sozialen Diensten“ (übertragbar auf das gesamte Bundesgebiet) schaffen sollen. Im einzelnen sind dabei Funktions- und Qualifikationsprofile von Leitungskräften in sozialen Organisationen zu ermitteln sowie Lehrgangsunterlagen und Materialien zu erarbeiten.

Das Untersuchungsfeld liegt im Raum Berlin. Vorgesehen sind Modellmaßnahmen zur Weiterbildung von:

- Fürsorgern/innen mit künftiger Leitungsfunktion,
- arbeitslosen bzw.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n Erziehern/innen, Klub- und Pionierleitern/innen für den Aufbau und die Leitung von Einrichtungen der Jugendhilfe,
- arbeitslosen bzw.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n Mediznern/innen, Diplom- und Fachschul-Medizinpädagogen/-innen, Diplom Lehrern/innen, Lehrern/innen für die Unterstufe, vor allem für den Aufbau von Sozialstationen und mit einer berufsbegleitenden Qualifizierung für die Ausübung von Leitungsfunktionen.

Die genannten Modellmaßnahmen sollen eine Grundlage zur konzeptionellen Absicherung des sozialen Leistungsangebots in den neuen Ländern darstellen. Hierzu gehört auch eine Intensivierung der Ausbildung und Umschulung in den Pflegeberufen, die es in der früheren DDR, von kirchlichen Ausbildungen, wie z. B. zum Altenpfleger und Heilerziehungshelfer, abgesehen, nicht gab. Hier besteht ein enormer Nachholbedarf.

## 6.9 Weiterbildungsforschung

### 6.9.1 Zum Stand der Weiterbildungsforschung

Die Weiterbildungsforschung konnte bisher mit der raschen Expansion des Weiterbildungsbereichs nicht Schritt halten. Die Defizite, insbesondere in der betrieblichen Weiterbildungsforschung, wurden zuletzt in den Gutachten des 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IW) und des Soziologischen Forschungsinstituts der Universität Göttingen (SOFI) deutlich belegt<sup>1)</sup>.

Inzwischen werden vielfältige Ansätze zur Intensivierung der Weiterbildungsforschung verfolgt<sup>2)</sup>.

Die festgestellten Defizite können nicht durch einzelne Forschungseinrichtungen behoben werden. Die Vielzahl der unterschiedlichen Forschungsinteressen und -fragestellungen erfordert vielmehr die Beteiligung und Kooperation unterschiedlicher Forschungseinrichtungen und Disziplinen. Eine Arbeitsteilung und Kooperation zwischen Hochschulen, außeruniversitären Forschungseinrichtungen und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im Sinne eines „Netzwerkes“ ist deshalb bereits seit längerer Zeit in der Diskussion.

Mit der Gründung einer Arbeitsgemeinschaft „Berufsbildungsforschungsnetz“ (AG BFN) im Juli 1991 haben die Kommission Berufs- und Wirtschaftspädagogik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DGfE), das Institut für Arbeits-

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AB) und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 Grundlagen einer Zusammenarbeit zur Verstärkung der Berufsbildungsforschung (einschließlich der Weiterbildungsforschung) geschaffen. Ziel der Arbeitsgemeinschaft ist, auf der Grundlage einer verbesserten gegenseitigen Information die Berufsbildungsforschung durch Austausch von Forschungsergebnissen, Daten und Dokumentationen zu fördern. Zu den geplanten Aktivitäten gehören die Einrichtung einer Forschungsdokumentation, einer Literaturdokumentation sowie die regelmäßige Veranstaltung eines „Forum Berufsbildungsforschung“<sup>1)</sup>.

Ein weiterer Schritt zur Verstärkung der Weiterbildungsforschung ist mit der Gründung der „Arbeitsgemeinschaft betriebliche Weiterbildungsforschung e. V.“ (ABWF) erfolgt. Auch diese Arbeitsgemeinschaft versteht sich als Teil eines Netzwerkes in der Berufsbildungsforschung.

Die inzwischen mit finanzieller Unterstütz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ngelaufenen Projekte der Arbeitsgemeinschaft konzentrieren sich auf Betriebe und Regionen der neuen Länder; Forschungsaktivitäten werden dabei durch Entwicklungsarbeiten ergänzt, um möglichst rasch zu Verbesserungen in der Weiterbildungspraxis zu kommen:

- Im Rahmen eines Verbundprojekts zur
  - Qualifizierungsprozeßbeobachtung in den neuen Ländern geht es im einzelnen um
  - die Weiterqualifizierung von Arbeitern und Angestellten sowie die Probleme der „Reorganisation“ der beruflichen/betrieblichen Weiterbildung für untere und mittlere Qualifikationsebenen,
  - den Systemtransfer, die Mobilisierungsprobleme und die Potentiale von statusbezogener Weiterbildung (am Beispiel des mittleren Qualifikationsbereichs) sowie
  - die Verbesserung der Weiterbildung von Führungs- und Fachkräften.
- Für die „Qualifizierung von Führungskräften in der betrieblichen Weiterbildung und Personalentwicklung“ werden im Rahmen eines Bausteinsystems Materialien entwickelt und eine berufsbegleitende Fortbildung durchgeführt.
- Durch das Projekt „Innovationstransfer beruflich-betriebliche Weiterbildung“ wird mit der Akzentsetzung auf die regionale Bedarfsanalyse, die Förderung eines lokal-regionalen Netzwerkes der an der Weiterbildung Beteiligten und die Qualitätssicherung von Maßnahmen ein Beitrag zur Regionalentwicklung geleistet.

Im Bereich der vergleichenden Weiterbildungsforschung gibt es auf EG-Ebene Anstrengungen, die Daten- und Informationslage in der Weiterbildung zu verbessern. Im Rahmen des FORCE-Programms ist der Austausch von vergleichbaren Daten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geplant. Dabei geht es zum einen um den systematischen Vergleich der in den Mitgliedernländern vorhandenen Daten und zum anderen um die Durchführung einer auf die betriebliche Weiterbildung konzentrierten Erhebung.<sup>2)</sup>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139

<sup>2)</sup> Vgl. Sauter, E.: Weiterbildungsforschung — Stand und Perspektiven,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Heft 4, 1991, Seite 25f. und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Berufsbildungsforschung an den Hochschu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nkschrift, 1990

<sup>1)</sup> Vgl. Kommission Berufs- und Wirtschaftspädagogik, Deutsche Gesellscha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Berufsbildungsforschungsnetz in Deutschland, in: Zeitschrift für Berufs- und Wirtschaftspädagogik, Heft 6, 1991, Seite 510 ff.

<sup>2)</sup> Vgl. Beschluß des Rates vom 29. Mai 1990 über ein Aktionsprogramm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FORCE), in: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Nr. L 156/6 vom 21. Juni 1990

Angesichts uneinheitlicher Definitionen und differenzierter Strukturen der Weiterbildung stehen vergleichende Untersuchungen auf EG-Ebene vor erheblichen methodologischen und forschungspraktischen Problemen. Das Ziel solcher Forschungsvorhaben, praktisch verwertbare Informationen für das Handeln der an der Weiterbildung Beteiligten (individuelle Nachfrager, außerbetriebliche Bildungsträger, Betriebe, Staat und andere Financiers) zu erhalten, dürfte nur dann zu erreichen sein, wenn von den Untersuchungen eine Reihe von Anforderungen erfüllt werden, zu denen insbesondere die folgenden gehören<sup>1)</sup>:

- Das Spektrum der Weiterbildung reicht von Formen des organisierten Lernens in schulischen Einrichtungen bis zu den in die Arbeit integrierten Lernprozessen. Durch einheitliche Definitionen ist zu gewährleisten, daß das gesamte Spektrum adäquat erfaßt wird.
- Der Bereich der Weiterbildung ist durch differenzierte Anbieter-, Angebots- und Finanzierungsstrukturen gekennzeichnet. Ein Gesamtbild des Bereichs ist deshalb nur mit unterschiedlichen Erhebungsverfahren zu erreichen, die sowohl auf der Nachfrageseite (Individuen, Betriebe) als auch auf der Anbieterseite ansetzen (Betriebe, außerbetriebliche Träger).
- Die Ergebnisse der Erhebungen müssen jeweils in Zusammenhang mit den nationalen Weiterbildungsstrukturen analysiert und interpretiert werden; dies setzt die Transparenz der nationalen Berufsbildungssysteme voraus.

### 6.9.2 Aspekte der Qualifikation und der Qualifizierung in Projekten des Programms „Arbeit und Technik“

Im Programm „Arbeit und Technik“ (AuT), das gemeinsam vom Bundesministerium für Forschung und Technologie, dem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sowie de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getragen wird, nimmt Qualifikation eine Schlüsselstellung für die menschengerechte Bewältigung heutiger und zukünftiger Anforderungen an die Gestaltung von Arbeit und Technik ein. Das Innovationsverständnis des Programms zielt auf neue Gestaltungslösungen, die technische, ökologische, organisatorische und gesundheitliche Aspekte in ihren Zusammenhängen und Wechselwirkungen mit qualifikatorischen Komponenten verbinden.

Es wird erwartet, daß die Forschungsergebnisse des Programms Auswirkungen auch für das Berufsbildungssystem haben werden, insbesondere bei der Gestaltung von Aus- und Fortbildungsordnungen, der Konzipierung und Betreuung von Modellvorhaben, der Entwicklung von Konzepten für die Qualifizierung des Lehrpersonals und für die Gestaltung praxisnaher Weiterbildung. Andererseits sollen Ergebnisse der Berufsbildungsforschung und -planung in die Projektansätze des Programms AuT einfließen. Um diesen wechselseitigen Austausch zu sichern, ist zwischen den genannten Trägern des Programms eine vielschichtige Zusammenarbeit vereinbart worden, die von der Ressortkoordination über den Gesprächskreis „Arbeit und Technik“, die Sachverständigen- und Koordinierungskreise in den Programmschwerpunkten bis zur Beteiligung bei der Initiierung und Betreuung von einzelnen Projekten reicht.

In der gegenwärtigen Startphase richtet sich das Interesse vorrangig auf Vorhaben, die neue Forschungs- und Entwicklungsfelder und damit Fragestellungen für weiterführende Pro-

jekte erschließen. Inhaltlich steht bei den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treuten Einzelvorhaben des Programms das Anliegen im Vordergrund, Innovationspotentiale durch berufliche Aus- und Weiterbildung von Beschäftigten soweit wie möglich für eine „ganzheitlichere“ und selbständigere Aufgabenwahrnehmung nutzbar zu machen.

So befaßt sich das Vorhaben „Arbeitsschutz und Umweltschutz“, das von der Gesellschaft für Arbeitsschutz und Humanisierungsforschung mbH, Dortmund, durchgeführt wird, mit den Möglichkeiten, Umweltschutzaufgaben mit Aufgaben des traditionellen Arbeits- und Gesundheitsschutzes zu verbinden und entsprechende Qualifizierungsangebote darauf auszurichten. Mit dieser Zielsetzung werden die Tätigkeitsfelder und Berufsverläufe von „Fachkräften für Umweltschutz“ analysiert und entsprechende Weiterbildungsempfehlungen erarbeitet.

Das Vorhaben „Sekretariat der Zukunft“ des Fraunhoferinstituts für Arbeitswirtschaft und Organisation in Stuttgart untersucht die Entwicklungstrends im Sekretariatsbereich, die sich durch die Einführung der neue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en ergeben können. Besonders interessieren die entstehenden Spielräume bei Organisationsgestaltung, Entscheidungsbeteiligung und Qualifizierung. Zielsetzung ist es, inhaltliche und organisatorische Gestaltungs- und Qualifizierungsempfehlungen für den Sekretariatsbereich zu erarbeiten. Auf diese Weise wird auch eine Basis für die anstehende Überarbeitung der seit 1975 geltenden Fortbildungsverordnung für Sekretärinnen/Sekretäre geschaffen.

Der „Verbesserung der Innovationsfähigkeit des Sanitär-, Heizungs- und Klima-(SHK)-Handwerks“ dient ein Vorhaben, das vom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Innovationsforschung in Berlin begonnen worden ist. Es analysiert am Beispiel des Arbeitsfeldes Energie- und Umwelttechnologie Innovationsbarrieren des Handwerks. Gemeinsam mit den beteiligten Betrieben, Kammern und Verbänden des Handwerks sollen Beratungs- und Qualifizierungsstrategien entwickelt werden, die ein neues Dienstleistungsverständnis der Handwerker in dem Bereich Energie und Umwelt fördern. Das zu erarbeitende Innovationskonzept wird in einer zweiten Entwicklungsphase für die neuen Länder nutzbar gemacht.

Der Lehrstuhl für Wirtschafts- und Sozialpädagogik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arbeitet zur Zeit in Kooperation mit der Handwerkskammer Koblenz an einem Entwurf für den Einsatz moderner Rechner-technologie zur Erweiterung der Planungs- und Entscheidungsfähigkeit in Handwerksbetrieben der Fertigungs- und Energietechnik. Hiermit wird ein umfangreicheres Forschungs- und Entwicklungsvorhaben vorbereitet, mit dessen Hilfe Qualifizierungsmodule für die computerunterstützte Auftragsabwicklung im Handwerk entstehen sollen. Gleichzeitig werden Möglichkeiten multimedialen Lernens im Handwerk exemplarisch erkundet.

<sup>1)</sup> Vgl. Dokumentation der BMBW/BIBB/IW-Fachtagung „Weiterbildung im europäischen Vergleich“, Oktober 1991 (in Vorbereitung)

Ausbildungsbeauftragten hinsichtlich der Organisation der Berufsausbildung (Zeiteinteilung, Zuordnung von Fachabteilungen, die Schwerpunkte einzelner Ausbildungsabschnitte) wurden erörtert und zu einem Gesamtkonzept der Berufsausbildung zusammengestellt.

Danach wurden in Abstimmung mit den Ausbildern vor Ort neue Schwerpunkte für die Seminare vereinbart. Feste Bestandteile dieser Seminare sind u.a.:

- Weiterbildung der Ausbilder vor Ort in den Bereichen Methodik und Didaktik betrieblicher Berufsausbildung;
- Pädagogische Gespräche über Auszubildende. Diese Gespräche erleichtern eine abgestimmte,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zubildenden;
- Informationsveranstaltungen über betriebsinterne Fachgebiete (z.B. Marketingstrategien, Konjunkturentwicklung, Personalpolitik, Produktionstechnik, Investitionen). Zu diesen Themen ist eine Beteiligung von Fachleuten aus dem Unternehmen vorgesehen;
- Meinungsaustausch und ggf. gemeinsamer Beschluß über Neuerungen in der Organisation der Berufsausbildung. Dazu zählen z.B. die Einführung eines Lernpasses, Änderungen des Beurteilungssystems, Einarbeitung der Ausbildungstätigkeit in die Stellenbeschreibungen, die Erstellung von schriftlichen Ausbildungserfahrungen über die Abteilungsausbildung durch die Auszubildenden;
- Systematisierung der Ausbildung in den Fachabteilungen.

### 7.3.3 Weiterbildung vo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n in den neuen Ländern

Im Mittelpunkt der durch die Umstrukturierung der Betriebe notwendigen Veränderunge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stehen in den neuen Ländern die betriebliche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 Sie müssen entsprechend weitergebildet werden. Frauen sollen dabei angemessen beteiligt werden. Notwendig ist eine Fort- und Weiterbildung in berufspädagogischen Fragen, in den neuen Technologien und im Umweltschutz. Inhaltlich und methodisch müssen Themen behandelt werden, die in den Ausbilder-Eignungsverordnungen und im Rahmenstoffplan zur Ausbildung der Ausbilder, die zur Zeit ergänzt bzw. überarbeitet werden, aufgeführt sind. Es handelt sich um Grundfragen der Berufsausbildung, um die Planung und Durchführung der Ausbildung, um Jugendliche in der Ausbildung und um Rechtsgrundlagen.

Die Qualität der Umstrukturi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hängt wesentlich auch von dem Engagement, der Kreativität und dem Organisationstalent der Ausbilderinnen und Ausbilder ab.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at daher bereits 1990 die Weiterbildung von Fachkräften der beruflichen Bildung vorangetrieben. Vor allem wurden Multiplikatoren qualifiziert, die anschließend selbst Jugendliche ausbilden und Erwachsene weiterbilden sollen. 1990 wurden 36 Qualifizierungsmaßnahmen mit rund 5000 Teilnehmern mit 6,8 Mio. DM bezuschußt. Dabei wurde auch — in Abstimmung mi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 die Weiterbildung von Berufsschullehrern unterstützt, da die für die Weiterbildung der Berufsschullehrer zuständigen neuen Länder diese Aufgabe 1990 noch nicht wahrnehmen konnten.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st auch mittelfristig bereit, die Qualifizierung vo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n zu unterstützen. Daher wurde ein Programm zur Qualifizierung von Multiplikatoren Ende 1990 aufgelegt und

dafür für 1991 20 Mio. DM und für 1992 25 Mio. DM bereitgestellt.

Vor allem Ausbilderinnen und Ausbilder aus mittelständischen und kleinen Betrieben der Industrie, des Handels, des Handwerks und der Freien Berufe sollen neben den bereits genannten Bereichen vor allem mit dem Berufsbildungsrecht, der Planung und Organisation einer modernen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und mit den Anforderungen neuer Ausbildungsberufe vertraut gemacht werden. Das künftige Ausbildungspersonal soll auf die Rolle des Ausbilders als Lernberater vorbereitet werden und unterschiedliche Lernmethoden — wie z.B. die Projekt- und Leittextmethode — praktizieren lernen.

Die geförderten Maßnahmen können, vor allem hinsichtlich der fachlichen Ausbildung, an die Berufsausbildung in der früheren DDR anknüpfen, die ein beachtliches Niveau hatte.

Im Rahmen der Projekte soll ein Transfer von Innovationen stattfinden, die in Modellvorhaben und Forschungsvorhab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folgreich in den letzten Jahren entwickelt und erprobt wurden.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setzt sich dafür ein, daß alle Qualifizierungsmaßnahmen in enger Zusammenarbeit von Betrieben und Weiterbildungsträgern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durchgeführt werden. Die überbetrieblichen Weiterbildungsträger sind bemüht, auch Betriebspraktika für ihre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nzubieten.

Bei der Ausbilderförderung wurde vor allem mit dem Deutschen Industrie- und Handelstag, dem 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und der Zentralstelle für die Weiterbildung im Handwerk, den Weiterbildungsträgern der Gewerkschaften und anderen Trägern, wie z.B. die Stiftung berufliche Bildung in Hamburg und das Berufsförderungszentrum in Essen und Chemnitz zusammengearbeitet. Zunehmend werden Betriebe und Weiterbildungsträger aus den neuen Ländern unterstützt, z.B. in Güstrow, Magdeburg, Dessau, Gera, Suhl, Leipzig, Dresden und Berlin/Brandenburg.

Durch den Aufbau eines überregionalen Weiterbildungsnetzwerkes für Ausbilderinnen/Multiplikatorinnen für die Weiterbildung und Weiterbildungsberatung von Frauen soll eine stärkere Beteiligung von Frauen an diesen Aufgaben sowie eine Berücksichtigung der Belange von Frauen im Bereich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erreicht werden. Besondere Schwerpunkte der Arbeit liegen in folgenden Bereichen: Informationstechnik, Weiterbildungsmethoden und -management, Fremdsprachen/EG und Weiterbildungsberatung.

Ferner zielen die Maßnahmen auf die Weiterbildung von Mitgliedern von Prüfungs- und Berufsbildungsausschüssen, von Ausbilderinnen und Ausbildern, die Behinderte aus- und weiterbilden, und von Personal der beruflichen Bildung im landwirtschaftlichen Bereich.

Im Rahmen eines Forschungsvorhabens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zur „Prozeßbegleitung von Maßnahmen zur Qualifizierung von Multiplikatorinnen und Multiplikatoren in der beruflichen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sollen die über 40 Einzelmaßnahmen, die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ördert, evaluiert, dokumentiert und fachlich koordiniert werden.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teiligt sich sowohl an dem Transfer von Innovationen in die neuen Länder als auch an der fachlichen Betreuung einzelner Maßnahmen. Alle Maßnahmen zielen auf eine qualifizierte berufliche Weiterbildung für

Multiplikatorinnen und Multiplikatore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auf möglichst hohem Niveau.

Einige Beispiele sollen im folgenden vorgestellt werden:

*Seminarkonzept „Motivation in der Ausbildung zu lebenslangem Lernen“*

Bereits Ende Oktober 1990 wurde das Seminarkonzept „Motivation in der Ausbildung zu lebenslangem Lernen“ in einem ersten Pilotseminar erprobt. Da dieses Seminarpaket auch auf dem Gebiet der früheren DDR eingesetzt werden sollte, wurden als Teilnehmer je zur Hälfte Ausbilder aus Betrieben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eingeladen.

Im Verlauf der Veranstaltung hat sich gezeigt, daß das Seminarthema gerade bei den Ausbildern aus den neuen Ländern auf große Resonanz traf. Der Erfahrungsaustausch in einem gemeinsamen Ost-West-Seminar hat sich in Form gegenseitiger Annäherung und der damit verbundenen informellen und individuellen Weiterbildung positiv ausgewirkt.

Vor dem Hintergrund der im Pilotseminar gesammelten Erfahrungen sind die verwendeten Materialien inzwischen im Hinblick auf praxisbezogene Beispiele überarbeitet worden. Dabei wurden auch die spezifischen Vorkenntnisse und Lernbedürfnisse der Zielgruppe aus den neuen Ländern berücksichtigt.

*Informationsveranstaltungen für Multiplikatoren*

Im Dezember 1990 wurden vier Informationsveranstaltungen für Multiplikatoren an verschiedenen Orten in den neuen Ländern durchgeführt. Dafür wurden Kooperationspartner in Schwerin, Rostock, Gotha und Dresden gewonnen.

In der jeweils eintägigen Veranstaltung wurden zwischen 50 und 80 Teilnehmer zu folgenden Themen informiert:

- Ausbilder/Ausbildenden heute — neue Anforderungen, veränderte Vermittlungsprozesse
- Moderne Methoden zur Entwicklung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 Neue Berufe — neues Lernen in der Metalltechnik.

Die Teilnehmer hatten die Gelegenheit, sich über zwei von drei Themen intensiv zu informieren. Parallel fand eine Ausstellung der „Seminarkonzepte zur Ausbilderförderung“ statt, in der auch ausgewählte Ausbildungsmittel präsentiert wurden.

In einer schriftlichen Befragung wurden die Teilnehmer um eine Stellungnahme zu den Veranstaltungsinhalten, der Art und Weise der Präsentation und zu eigenen Problemen gebeten. Die Ergebnisse wurden inzwischen veröffentlicht<sup>1)</sup>.

*Broschüre „Zur Selbständigkeit ausbilden“*

Selbstständigkeitsfördernde Ausbildungsmethoden finden nicht nur in den alten, sondern auch in den neuen Ländern große Aufmerksamkeit. Für Hilfen auf diesem Gebiet besteht ein überdurchschnittlicher Bedarf. Aus diesem Grunde wurde aus bereits vorliegenden Seminarkonzepten eine Broschüre zusammengestellt, die praktische Tips und Hilfen für die Ausbildung

<sup>1)</sup> Vgl. Hoch, Hans-Dieter; Schlottau, Walter; Schmidtman Ehnert, Angelika; Selka, Reinhard: Im Osten viel Neues. Erfahrungen aus Multiplikatorenveranstaltungen für das Ausbildungspersona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Heft 3/1991, Seite 17 ff.

vor Ort gibt.<sup>1)</sup> Die große Nachfrage machte bereits einen dritten Nachdruck erforderlich.

*Broschüre „Ausbildung im Einzelhandel“*

In den neuen Ländern kommt der Ausbildung im Einzelhandel eine große Bedeutung zu. Die Veränderung der Verteilerfunktion des Einzelhandels hin zu einer an der Vielfalt von Waren orientierten qualifizierten Kundenberatung macht eine grundlegende Neuorientierung bei der Ausübung des Berufes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erforderlich.

Der Beruf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ist auch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 vergleichsweise neuer Beruf. Er zielt ab auf ein einheitliches und breites warenkundliches Grundwissen und die Besonderheiten der jeweiligen Fachbereiche, die sozialen Qualifikationen für die Kundenberatung und die Kompetenz in der Planung, Steuerung und Kontrolle der Warenbewegungen.

Eine Hilfestellung bei der Durchführung der Ausbildung zum Kaufmann/zur Kauffrau im Einzelhandel in den neuen Ländern ist die Verwendung der Broschüre zum Thema „Berufsausbildung junger Ausländer im Einzelhandel“<sup>2)</sup>. Diese Broschüre basiert auf den Erfahrungen eines Modellversuchs im Berliner Einzelhandel, der im Rahmen des Programms der Bundesregierung „zur Förderung der Ausbildung von ausländischen Jugendlichen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durchgeführt wurde. Die dort enthaltenen Hilfestellungen sind in 10 Tips für die Ausbildungspraxis zusammengefaßt.

Gemeinsam mit Experten aus den neuen Ländern wird diese Schrift neu aufbereitet und auf die dortigen Bedürfnisse abgestellt. In der überarbeiteten Fassung soll sie sich auf die Ausbildung aller Jugendlichen beziehen.

*Seminarkonzept „Leittexte — ein Weg zu selbständigem Lernen“*

Zur Einführung einer leittextgestützten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sind eine Reihe ergänzender Informationen erforderlich, insbesondere zur Planung der Ausbildung, der Organisation von Ausbildung und Arbeit, zur Entwicklung von Projekten und zum Lernen am Arbeitsplatz. Daher wird im Zuge der Aktualisierung des Seminarkonzepts ein Ergänzungsband erstellt, der Antworten auf diese Fragen gibt. Erkenntnisse für die Überarbeitung wurden in einem Pilotseminar mit außerbetrieblichen Ausbildern aus den neuen Ländern gewonnen.

Am Seminarkonzept „Leittexte — ein Weg zu selbständigem Lernen“<sup>3)</sup> soll exemplarisch verdeutlicht werden, welche Aspekte bei der Entwicklung von Weiterbildungsmaterialien zu berücksichtigen sind, um die besonderen Bedingungen in den neuen Ländern angemessen einzubeziehen und welche Erfahrungen dabei gesammelt wurden.

Insgesamt geht es darum, beispielhafte Modelle der beruflichen Bildung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aus der früheren DDR aufzugreifen und sie mit dem Ziel einer zukunftsorientierten beruflichen Bildung weiterzuentwickeln.

<sup>1)</sup> Zur Selbständigkeit ausbilden. Tips und praktische Hilfen.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lin 1990

<sup>2)</sup> Berufsausbildung junger Ausländer im Einzelhandel. — Zehn Tips —.

<sup>3)</sup> Seminarpaket: Leittexte — ein Weg zu selbständigem Lernen (drei Bände für Veranstalter, Referenten und Teilnehmer) ergänzt um je einen Band für Referenten und Teilnehmer in den neuen Ländern. Dieses Seminarkonzept kann be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Referat K 3, bezogen werden.

Haushaltsansätze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lagen 1991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ei insgesamt 347 Mio. DM (siehe **Tabelle 8/2**).

### 8.2.2.3 Förderung der neuen Länder durch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Zur Förderung der neuen Länder stellt die EG für 1991 bis 1993 insgesamt rund 6,2 Mrd. DM bereit.<sup>1)</sup>

- Der EG-Sozialfonds beteiligt sich mit 1,85 Mrd. DM an der Lösung von Arbeitsmarkt- und Strukturproblemen. Davon gehen 1,37 Mrd. DM direkt an die neuen Länder, während 480 Mio. DM über den Bund verteilt werden. Im Mittelpunkt dieser Förderung stehen u. a. Maßnahmen zur arbeitsmarktpolitischen Flankierung des wirtschaftlichen Anpassungsprozesses, zur Qualifizierung und Umschulung sowie Beschäftigungs- und Einstellungsbeihilfen. Begünstigt werden jugendliche Arbeitslose, Langzeitarbeitslose sowie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 Personen.
- Aus dem Europäischen Regionalfonds stehen für Investitionsmaßnahmen im Aus- und Weiterbildungsbereich 226 Mio. DM zur Verfügung.
- Darüber hinaus haben Bildungseinrichtungen in den neuen Ländern die Möglichkeit, für Projekte im Bereich der Aus- und Weiterbildung EG-Mittel zu beantragen. Wichtige Fördermöglichkeiten auf diesem Gebiet sind vor allem die Aktionsprogramme LINGUA, PETRA, FORCE UND EUROTECNET. Die Betreuung dieser Programme erfolgt bei LINGUA durch nationale Agenturen, bei PETRA durch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bei FORCE und EUROTECNET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vgl. auch **Kapitel 9**).

### 8.2.3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Die Aus- und Weiterbildung konzentrierte sich in der früheren DDR auf Kombinate und Großbetriebe. Auf sie entfielen rund 70% der betrieblichen Ausbildungsleistungen. Der Nachwuchs für kleinere Betriebe wurde von diesen Großbetrieben in „Kooperation“ mit ausgebildet.

Seit der Entflechtung der Kombinate und Großbetriebe ist die Aufgabe der Nachwuchssicherung auch von de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zu leisten. Hierfür sind Hilfestellungen notwendig.

#### *Ziele und Konditionen der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Die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entspricht den Grundsätzen der Ausbildungsunterstützung mittelständischer Betrieb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sollen dazu beitragen, Klein- und Mittelbetriebe in die Lage zu versetzen,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anzubieten (quantitativer Aspekt) und den Anforderungen einer modernen Ausbildung gerecht zu werden (qualitativer Aspekt).

<sup>1)</sup> Bildungsplanerische Aufgaben der BLK im geeinten Deutschland.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Bonn 1991.

In der Phase der wirtschaftlichen und beruflichen Neuorientierung in den neuen Ländern verstärken sich die Gründe für eine Unterstützung der beruflichen Bildung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Die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soll insbesondere:

- die Qualifizierung von Fach- und Führungskräften für die Klein- und Mittelbetriebe ermöglichen und sichern,
- den Modernitätsrückstand dieser Betriebe verringern helfen,
- den schrittweisen Aufbau eines Netzes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gewährleisten und
- die Finanzierung der laufenden Kosten der neu geschaffene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vorübergehend bis zur Übernahme dieser Kosten durch die Trägerorganisationen sicherstellen.

Folgende Kosten können gefördert werden:

Förderung investiver Kosten:

Gefördert werden können alle Investitionskosten, die zur Schaffung und Ausstattung notwendiger, moderner, funktionstüchtiger Werkstatträume, sonstiger Lehr- und Unterrichtsäume, Internatsplätze, Küchen- und Kantinenräume, Verwaltungsräume anfallen (Bau- und Ausstattungskosten).

Zu den Bauinvestitionen zählen Neu-, Erweiterungs- und Umbaukosten sowie Kosten der baulichen Modernisierung. Zu den Ausstattungsinvestitionen zählen notwendige Maschinen, Geräte, Werkzeuge und Gegenstände der Betriebs- und Geschäftsausstattung sowie Lehr- und Lernmittel.

Zur Beschleunigung des Antragsverfahrens und zur besseren Abwicklung können auch Leistungen gefördert werden, die durch die Betreuung einer Institution der alten Bundesländer (Kammer oder Verband) entstehen. Hierfür sind Förderhöchstgrenzen festgelegt worden.

Es werden Zuschüsse zu den ausgabewirksamen, förderfähigen Kosten gewährt (Anteilfinanzierung). Die Förderung beträgt derzeit bis zu 90% der zuwendungsfähigen Ausgaben. Für Leistungen des Betreuungspartners werden Zuschüsse bis zu 80% der berücksichtigungsfähigen Ausgaben gewährt.

Förderung laufender Kosten:

Für einen begrenzten Zeitraum können die laufenden Kosten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vom Bund gefördert werden, und zwar:

- zur Vorbereitung des Bildungsbetriebes und
- zum laufenden Betrieb ein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

Die Förderung von Aufwendungen für die Vorbereitung des Betriebes setzt voraus, daß die Einrichtung oder die Erweiterung d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 aus dem Haushalt des Bundes gefördert worden ist (Investitionskosten-Förderung für Bau- und/oder Ausstattungsvorhaben) und die geschaffenen Bildungskapazitäten in erster Linie der Durchfüh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ausbildungsmaßnahmen dienen. Die notwendigen Personal- und Sachausgaben können bezuschußt werden. Der Zuschuß beträgt derzeit bis zu 80% der zuwendungsfähigen Ausgaben, sofern andere öffentliche Mittel nicht gewährt werden. Die Förderung ist auf einen Zeitraum von bis zu sechs Monaten je Förderabschnitt begrenzt.

Die Förderung des laufenden Betriebes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bezieht sich auf die Nutzung vorhandener Berufsbildungskapazitäten für ergänzende überbetriebliche Berufsausbildungsmaßnahmen. Andere Bildungsmaßnahmen können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Die Förderung ist nicht von

einer vorherigen Investitionskosten-Förderung durch den Bund abhängig. Sie ist auf das Jahr der Inbetriebnahme und sechs weitere Haushaltsjahre beschränkt. Der Zuschuß beträgt

- 6000 DM für einen gewerblichen Ausbildungsplatz,
- 4800 DM für einen kaufmännischen Ausbildungsplatz,
- 3600 DM für einen Internatsplatz.

Die Beträge gelten als Höchstgrenze je Platz unter Zugrundelegung einer Nutzung/Auslastung von 40 Teilnehmerwochen (TnWo) pro Jahr. Der Förderbetrag wird für voll erbrachte 40 Teilnehmerwochen pro Jahr gewährt.

#### *Träger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Als Träger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komme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wie die Selbstverwaltungsorganisationen der Wirtschaft (Kammern, Kreishandwerkerschaften, Innungen), und kommunale Körperschaften (Städte, Gemeinden, Landkreise, Zweckverbände) in Betracht sowie im Sinne der Abgabenordnung gemein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en Rechts, etwa aus den Bereichen der Tarifparteien, der beruflichen Fachverbände sowie der kirchlichen und der „freien“ (Jugend-) Sozialarbeit. Die Förderung ein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 mit öffentlichen Mitteln kann nur vom Rechtsträger der Berufsbildungsstätte oder seinem Kooperationspartn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beantragt werden. Auf die Förderung besteht kein Rechtsanspruch. Sie erfolgt im Rahmen verfügbarer Haushaltsmittel.

#### *Verfahren zur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Im Rahmen der Gewerbeförderung kann auch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Zuwendungen zum Bau, zur Modernisierung und zur Ausstatt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gewähren. Auf der Grundlage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hat auch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Möglichkeit,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zu fördern.

Im Interesse eines koordinierten Aufbaus eines Netzes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in den neuen Ländern haben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ein Verfahren zur abgestimmten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vereinbart. Danach ergeben sich für die Investitionsförderung folgende Zuständigkeiten:

-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die sowohl der ergänzenden Berufsausbildung als auch der Qualifizierung Erwachsener in Maßnahmen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dienen (multifunktionale Nutzung), werden gemeinsam aus den Haushalt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gefördert;
-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die ausschließlich der Berufsausbildung dienen, sowie Berufsbildungsstätten für die Bauwirtschaft werden schwerpunktmäßig aus dem Haushal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gefördert;
-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die ausschließlich Fortbildungszwecken des Handwerks dienen (z. B. Fortbildung zum Handwerksmeister), werden aus dem Haushal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gefördert;

—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die der Lösung arbeitsmarktpolitischer Anforderungen dienen, werden grundsätzlich aus dem Haushal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gefördert. Der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können sich an der Förderung dieser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beteiligen.

#### *Förderumfang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ür 1991 liegen 93 Anträge auf Investitionsförderung und 20 Anträge auf Förderung der laufenden Kosten vor (Stand: 31. Dezember 1991). Das Antragsvolumen beträgt:

- bei der Investitionskostenförderung rund 488 Mio. DM
- bei der Förderung der laufenden Kosten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9,5 Mio. DM.

Bewilligt werden konnten 19 Projekte mit einem Gesamtvolumen von rund 44 Mio. DM. Damit konnten

- rund 6100 Werkstattplätze (größtenteils provisorischer Natur zur beschleunigten Umsetzung der Stufenausbildung „Bau“),
- 190 Unterrichtsplätze

geschaffen bzw. modernisiert werden.

Für 20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konnten laufende Kosten in Höhe von insgesamt rund 2 Mio. DM mitfinanziert werden.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fördert nach dem seit Mitte 1990 laufenden Sonderprogramm des Bundesminister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zum raschen Aufbau eines Netzes hochwertiger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269 Modelleinrichtungen (Stand: 1991). Es entstehen damit rund 40000 Weiterbildungsplätze mit hohem Qualitätsstandard, die großenteils auch schon in Betrieb genommen sind. Bisher wurden dafür 420 Mio. DM zur Verfügung gestellt. Die Einrichtungen sind über alle 38 Arbeitsamtsbezirke in den neuen Ländern verteilt und umfassen das gesamte berufsfachliche Spektrum.

Im Rahmen de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 50 ff. AFG) waren im Haushal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für das Jahr 1991 180 Mio. DM für die neuen Länder vorgesehen. Bis Ende 1991 waren von den bereitgestellten Mitteln rund 158 Mio. DM in die neuen Länder abgeflossen. Es wurden rund 200 Projekte gefördert. Ziel der Förder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ist es, einen beschleunigten und verstärkten Auf- und Ausbau von beruflichen Bildungseinrichtungen zu erreichen, um damit die notwendigen Kapazitäten für die Ausbildung, Fortbildung und Umschulung zu schaffen.

Der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förderte aus seinem Haushalt 1991 die Schaffung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in Höhe von 65,8 Mio. DM. Ein erheblicher Teil dieser Mittel kam — zum Teil in gemeinsamer Finanzierung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der Förderung der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zugute. Insgesamt wurden vo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65 Bewilligungen ausgesprochen.

#### **8.2.4 Regionalförderung**

Als eines der Ergebnisse der Ruhrgebietskonferenz vom 24. Februar 1988 sind im Bundeshaushalt für die Jahre 1989 bis 1994 für den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insgesamt

91 Mio. DM vorgesehen: davon entfallen 75 Mio. DM auf die Förderung von Ausbildungsverhältnissen in solchen Ausbildungsstätten, die von Stilllegungen betroffen sind, und 16 Mio. DM auf Modellvorhaben zur Strukturverbesserung im Ruhrgebiet.

Ende 1991 befanden sich 1322 Jugendliche in Ausbildungsverhältnissen, die mit Hilfe des Sonderprogramms für die Sicherung von Ausbildungskapazitäten, die durch Stilllegungen im Ruhrgebiet betroffen sind, gefördert wurden. Die Ausbildung erfolgt insbesondere in den neu geordneten Metall- und Elektroberufen sowie in qualifizierten Büroberufen mit zusätzlichem EDV-Anteil. So befanden sich Ende 1991 unter anderem 584 Industriemechaniker, 350 Energieelektroniker und 111 kaufmännische Auszubildende in Ausbildung. Von der Gesamtzahl der geförderten Auszubildenden waren 328 Frauen und 454 Ausländer. Die Ausbildung wird in außerschulischer Trägerschaft durchgeführt. Die Ausbildungseinrichtungen werden von den betroffenen Betrieben unentgeltlich eingebracht. Die für eine teilweise Umstrukturierung erforderlichen Investitionskosten werden vom Land Nordrhein-Westfalen getragen.

Zur Verbesserung und Verbreiterung der berufsbildenden Struktur und zur Anpassung beruflicher Qualifikationen an die technischen und strukturellen Erfordernisse werden im Rahmen dieses Sonderprogramms Modellvorhaben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gefördert.<sup>1)</sup>

### 8.2.5 Förderung von Modellvorhaben

Zwischen 1971 bis 1990 sind für Modellvorhaben im Bereich der Berufsbildung vo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441 Mio. DM bewilligt worden, für Schulmodellvorhaben 226 Mio. DM und 215 Mio. DM für Wirtschaftsmodellvorhaben. Die Kultusministerien der Länder und die Wirtschaft haben zusammen eine annähernd gleichhohe Förder-summe aufgebracht.

Modellvorhaben als Instrument der zukunftsgerichteten Berufsbildungspolitik müssen innovative Lösungen für gegenwärtige und abschbare Probleme entwickeln und erproben. Sie müssen rechtzeitig gestartet werden, damit übertragbare Lösungen möglichst zum Zeitpunkt bereitstehen, ab dem sie benötigt werden. Im Sinne dieser vorausschauenden Politik wird die Förderung von Modellvorhaben sowohl neue Themenbereiche mit hoher bildungspolitischer Relevanz aufgreifen als auch kontinuierlich zu bearbeitende Themen sowie bereits begonnene Schwerpunktbereiche fortsetzen müssen.

Fortzusetzende Themenbereiche sind unter anderem:

- a) Neue Technologien, insbesondere in bisher nicht berücksichtigten Berufsfeldern und Qualifikationsebenen sowie in Verbindung mit anderen bildungspolitisch wichtigen Anliegen, z. B.:
  - Ältere Arbeitnehmer und neue Technologien
  - Nachqualifizierung und neue Technologien
  - Lernbehinderte, Benachteiligte und neue Technologien.
- b) Umweltschutz
- c) Berufliche Weiterbildung, insbesondere Anpassung an technisch-organisatorische Wandlungen

- d) Modernisierung von Bildungsgängen, -zielen und -inhalten
- e) Neue Lehr- und Lernmethoden und Lernhilfen
- f) Berufsbezogene Kreativität, Flexibilität u. a. Schlüsselqualifikationen
- g) Aus- und Fortbildung von Ausbildungs-, Fortbildungs- und Beratungspersonal
- h) Berufsbildungsangebote für Ausländer mit besonderer Nutzbarkeit in den Herkunftsländern sowie für Aus- und ehemalige Umsiedler
- i) Erweiterung des Berufsspektrums von Frauen sowie Verbesserung beruflicher Entwicklungs- und Aufstiegsmöglichkeiten für Frauen.

Neue Modellvorhaben-Themenbereiche liegen durch ihre Relevanz nahe:

- a) Berufsbezogene Fremdsprachenangebote, u. a. Maßnahmen im Hinblick auf den EG-Binnenmarkt
- b) Berufsbildungsangebote zur Förderung von Leistungsbereitschaft und -fähigkeit
- c) Modularisierung und adressenspezifische Gestalt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d) Computer als Lernhilfe, interaktives Lernen mit Medien
- e) Formen der Kooperation und didaktisch-methodischen Abstimmung zwischen Lernorten, die an Bildungsgängen arbeitsteilig mitwirken
- f) Qualifizierung für das Restaurieren, Sanieren älterer Bausubstanz und für den Denkmalschutz.

Im Rahmen des „Innovations-Transfer-Programms“ stellte der Bund im Jahre 1991 3,5 Mio. DM für Transfer- und Entwicklungsvorhaben zur Verfügung. Diese sollen zur schnellen Modernisierung der Berufsbildungspraxis in Einrichtungen der Wirtschaft und in beruflichen Schulen der neuen Länder beitragen und zugleich die strukturellen Änderungen der Wirtschaft und des Arbeitsmarktes abstützen.

Schwerpunktmaßnahmen dabei sind:

- Übertragung von Modellversuchsergebnissen und anderen innovativen Entwicklungen durch Seminare, Tagungen, Beratungsmaßnahmen etc.
- Entwicklung spezifischer Lösungen für eine zukunftsgerichtete Berufsbildung
- Planungs- und Entwicklungsvorhaben zur Anpassung der Berufsbildung an die strukturellen Veränderungen.

## 8.3 Ausbildungsvergütungen

### 8.3.1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ach § 10 Berufsbildungsgesetz hat jeder Auszubildende gegenüber seinem Ausbildungsbetrieb einen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Vergütung. Die Ausbildungsvergütungen werden in den meisten Wirtschaftszweigen zwischen den Sozialpartnern in den Tarifverhandlungen vereinbart. Die ausgehandelten Vergütungen sind von tarifgebundenen Betrieben als Mindestbeträge an die Auszubildenden zu zah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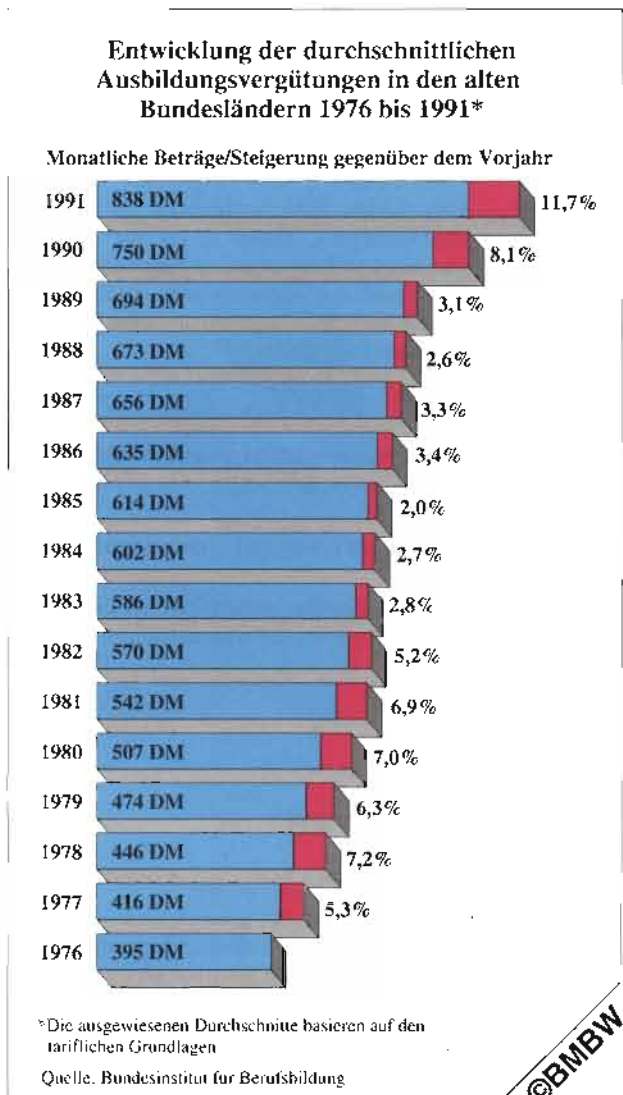
<sup>1)</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0, Seite 166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obachtet und analysiert die Entwicklung der tarif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seit 1976<sup>1)</sup>. Ausgewertet werden die jeweils aktuellen Tarifvereinbarungen aus über 400 Tarifbereichen der Bundesrepublik zum Stichtag 1. Oktober. Derzeit werden die durchschnittlichen Vergütungen für 211 stärker besetzte Ausbildungsberufe ermittelt, in denen 93 % der Auszubildenden vertreten sind.

Im Jahr 1991 betragen die tarif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im Durchschnitt 838 DM pro Monat. Gegenüber dem Vorjahr stiegen sie um 11,7% an; dies ist die stärkste Erhöhung der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letzten 15 Jahren. Bereits 1990 war eine im Vergleich zu den 80er Jahren sehr hohe Steigerungsrate erreicht worden, die 1991 noch einmal deutlich übertroffen wurde. Seit 1976 sind die Ausbildungsvergütungen nominal um 112% angestiegen (vgl. **Schaubild 18**).

<sup>1)</sup> Vgl. Beicht, Ursula/Holzschuh, Jürgen: Die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eitreihenuntersuchung auf der Grundlage tariflicher Vergütungen von 1976 bis 1988.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ichte zur beruflichen Bildung. Heft 122/1990

Schaubild 18



Zusätzlich zu den tariflichen Grundbeträgen sind in ca. 15% der Tarifverträge erhöhte Ausbildungsvergütungen für Jugendliche ab 18 Jahren festgelegt. Bei Berücksichtigung dieser altersabhängigen Zuschläge ergibt sich für 1991 ein Vergütungsdurchschnitt von 845 DM.

Erhebliche Vergütungsunterschiede bestehen zwischen den Ausbildungsbereichen (vgl. **Schaubild 19**): In Industrie, bei Banken, Versicherungen und im Bergbau sowie im Baugewerbe wurden 1991 — ebenso wie in den Vorjahren — durchschnittlich die höchsten Ausbildungsvergütungen gezahlt.

Für 82% der Auszubildenden lag die monatliche Vergütung zwischen 650 DM und 1000 DM. Weniger als 650 DM erhielten 8%, mehr als 1000 DM dagegen 10% der Auszubildenden.

An der Spitze befanden sich 1991 die Vergütungen im Gerüstbaugewerbe; Auszubildende ab 18 Jahren konnten in dem im Vorjahr neu geschaffenen Ausbildungsberuf Gerüstbauer/in durchschnittlich 1591 DM pro Monat erhalten. Auch die Ausbildungsvergütungen der künftigen Binnenschiffer/innen gehören mit durchschnittlich 1538 DM zu den höchsten Vergütungen. Im Bauhauptgewerbe wurden ebenfalls vergleichsweise hohe Vergütungen erreicht; den angehenden Maurern, Zimmerern, Straßenbauern, Stukkateuren/-innen, Fliesen-, Platten- und Mosaiklegern/-innen wurden im Durchschnitt 1322 DM gezahlt. Ausbildungsvergütungen über 1000 DM gab es darüber hinaus z.B. in den Berufen Versicherungskaufmann/-frau (1240 DM), Bergmechaniker (1168 DM) und Bankkaufmann/-frau (1011 DM).

Die mit Abstand geringsten Vergütungen erhielten die Auszubildenden im Herrenschneiderhandwerk mit 260 DM und im Damenschneiderhandwerk mit 281 DM. Vergleichsweise niedrig waren auch die Ausbildungsvergütungen im Friseurhandwerk mit 506 DM im Durchschnitt.

Bei den hier angegebenen Ausbildungsvergütungen ist zu beachten, daß es sich um Durchschnitte über die von Lehrjahr zu Lehrjahr ansteigenden Vergütungssätze handelt. Darüber hinaus differieren die Ausbildungsvergütungen auf Grund des bundesdeutschen Tarifsystems relativ stark nach Branchen und Regionen. Die Abweichungen von den ermittelten Durchschnitten können daher im Einzelfall beträchtlich sein.

### 8.3.2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neuen Ländern

Seit dem Sommer 1990 gilt das Berufsbildungsgesetz und damit der darin festgesetzte Anspruch der Auszubildenden auf eine angemessene Vergütung auch auf dem Gebiet der früheren DDR<sup>1)</sup>. In den neuen Ländern wurden zunehmend Tarifverträge abgeschlossen, die auch Vereinbarungen über die Ausbildungsvergütungen beinhalten.

Bereits ein Jahr nach Einführung d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waren die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neuen Ländern ebenso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größtenteils tarifvertraglich geregelt. Dabei bildete sich,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e sehr starke Differenzierung der Ausbildungsvergütungen heraus. Lediglich in den Wirtschaftsbereichen, in denen noch keine Tarifabschlüsse vorlagen, orientierten sich die Vergütungen zunächst noch an den vom Ministerrat der DDR festgelegten Lehrlingsentgelten<sup>2)</sup>.

<sup>1)</sup> Vgl. Beicht, Ursula/Berger, Klaus: Ausbildungsvergütungen: Große Veränderungen bei den Lehrlingsentgelten,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Sonderheft, November 1991, Seite 36 bis 38

<sup>2)</sup> Vgl. Verordnung über die Erhöhung der Entgelte der Lehrlinge vom 15. März 1990 (GBl. der DDR Teil I Nr. 18 Seite 170) sowie Berufsbildungsbericht 1991, Seite 156



**Durchschnittliche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pro Monat insgesamt und nach Ausbildungsbereichen**

**Gesamtdurchschnitte**

Nur Grundbeträge	838 DM
Mit altersabhängigen erhöhten Vergütungen	845 DM

**Ausbildungsbereiche\***

Industrie und Handel	935 DM
Öffentlicher Dienst	916 DM
Landwirtschaft	776 DM
Freie Berufe	746 DM
Handwerk	716 DM
Hauswirtschaft	702 DM

\* Für die einzelnen Ausbildungsbereiche sind die Durchschnitte unter Einbeziehung der altersbedingten Zuschläge ausgewiesen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ine Gesamtauswertung der tarif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war für die neuen Länder auf Grund fehlender statistischer Daten bisher nicht möglich.

Am Beispiel einiger ausgewählter Tarifbereiche wird ein Einblick in die Vergütungssituation der neuen Länder für 1991 wiedergegeben (vgl. **Übersicht 123**). Die höchsten tariflichen Ausbildungsvergütungen waren — ebenso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m Gerüstbaugewerbe festzustellen. Ebenfalls hohe Ausbildungsvergütungen wurden im Dachdeckerhandwerk und im Bauhauptgewerbe gezahlt. Die mit Abstand niedrigsten tariflichen Vergütungen waren im Herrenschneiderhandwerk in Berlin (Ost) zu verzeichnen. Auch für die Chemische Industrie waren relativ niedrige Ausbildungsvergütungen vereinbart. Ein Vergleich mit den westlichen Bundesländern zeigt, daß das Vergütungsniveau in den ausgewählten Tarifbereichen der neuen Länder 39% bis 75% der vergleichbaren Ausbildungsvergü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reichte.

**8.4 Stand der Kostenforschung auf dem Gebiet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Informationen über die Kosten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gehören seit den 70er Jahren zu den grundlegenden Aussagen über das deutsche Berufsbildungssystem. Repräsentative Untersuchungen zu den beruflichen Bildungskosten

wurden Anfang der 70er und 80er Jahre von unterschiedlichen Institutionen durchgeführt. In der Folgezeit wurden die Kosten der beruflichen Bildung regelmäßig hochgerechnet. Nachdem jedoch in den letzten Jahren ein Großteil der Ausbildungsberufe neu geordnet wurde, ist mit strukturellen Veränderungen bei den betrieblichen Ausbildungskosten zu rechnen. Eine weitere Hochrechnung dieser Kosten auf Grundlage der Erhebung von 1980 erscheint daher kaum mehr vertretbar.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führt deshalb für das Basisjahr 1990 eine Erhebung der Kosten und des Nutzens der außerschulischen beruflichen Ausbildung durch und wird damit wieder zuverlässige Informationen zu den Ausbildungskosten der Betriebe in der Bundesrepublik vorlegen.

Die Informationslage bei den beruflichen Weiterbildungskosten soll durch neue Kostenerhebungen weiter verbessert werden. Die betrieblichen Weiterbildungskosten der privaten Wirtschaft wurden für das Jahr 1987 vom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neu erfaßt.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ntersucht derzeit die Aufwendungen für Aus- und Weiterbildung in Großbetrieben anhand einer Analyse von Unternehmensbilanzen. Zu den Weiterbildungskosten der Privatpersonen wird zur Zeit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in Forschungsprojekt durchgeführt. Eine Erhebung zu den betrieblichen Weiterbildungskosten der öffentlichen Arbeitgeber ist geplant. Mit der Vorlage dieser Untersuchungsergebnisse wird der Informationsstand über die Kosten der betrieblichen beruflichen Weiterbildung erheblich erweitert.

*Stipendienprogramme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im Ausland*

Das vo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inanzierte und von der CDG durchgeführte Stipendienprogramm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besonderen Fachgebieten wurden auch 1991 weiter ausgebaut. In diesem Jahr wurden 64 Stipendien vergeben, 21 Weiterbildungsaufenthalte in den USA, 16 in Großbritannien, 10 in Italien, 7 in Frankreich, 3 in der Schweiz und in Spanien sowie jeweils 1 in Portugal, Belgien, Australien und Mexiko.

Viele Stipendien wurden für Weiterbildungsmaßnahmen im Kunsthandwerk vergeben.

Das Programm richtet sich nach wie vor an Personen, die über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erfügen und unterstützt nur Weiterbildungsmaßnahmen, die auch Nichtakademikern offenstehen.

Das Stipendienprogramm „Pro Venetia Viva“, mit dem deutschen Handwerkern die Möglichkeit geboten wird, an einer mehrmonatigen beruflichen Fortbildung in der Denkmalspflege in Venedig teilzunehmen, wurde fortgeführt.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im Ausland*

Die mit finanzieller Hilf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ei der CDG eingerichtete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m Ausland (IBS)“ stößt unverändert auf ein großes Interesse. 1991 wurden bei der IBS rund 15 000 Anfragen registriert. Die von der IBS erarbeitete Informationsbroschüre über die „Angebote deutscher Austauschorganisationen für eine berufliche Aus- und Weiterbildung für Deutsche im Ausland“ wurde fortgeschrieben und neu herausgebracht.

## 10. Anhang

### 10.1 Daten der Berufsbildungsstatistik

Die Daten über die berufliche Bildung werden fünf verschiedenen Bereichen entnommen, die jeweils eigene Definitionen verwenden.

*Statistik der zuständigen Stellen*

Die zuständigen Stellen melden jährlich zum 30. September die Anzahl der neu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gewählten Berufen und Berufsgruppen für jeden Arbeitsamtsbezirk an den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er mit der Durchführung der Erhebung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auftragt hat. Zusammen mit den regionalen Da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über die bei den Arbeitsämtern registrierten noch unbesetzten Plätze und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 zum 30. September werden diese Angaben zur Erstellung der aktuellen Ausbildungsplatzbilanz verwendet.

Die zuständigen Stellen führen außerdem das Verzeichnis der Berufsausbildungsverhältnisse in de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 31 Berufsbildungsgesetz; § 28 Handwerksordnung). Auf dieser Grundlage werden von den Statistischen Landesämtern die Berufsbildungsstatistiken des jeweiligen Bereichs zum Stichtag 31. Dezember zusammengestellt und an das Statistische Bundesamt weitergeleitet. Das Statistische Bundesamt gibt jährlich die Veröffentlichung „Berufliche Bildung“ heraus, die neben den Angaben über Auszubildende Daten über Ausbilder, Prüfungen, Weiterbildung und Ausbildungsberater enthält<sup>1)</sup>.

Die Statistiken der zuständigen Stellen — zusammengefaßt in der Veröffentlichung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 bilden die Grundlage der Berufsbildungsstatistik, da die Daten unmittelbar im Rahmen der Tätigkeit der zuständigen Stellen (Eintragung der Verträge in das Verzeichnis der Berufsausbildungsverhältnisse, Durchführung von Prüfungen, Bestellung von Ausbildungsberatern usw.) anfallen und daher eine genaue Abgrenzung der verschiedenen Tatbestände gemäß den Definitionen des Berufsbildungsgesetzes (BBiG) gewährleistet ist.

*Berufsschulstatistik der Länder*

Die Länder führen jährlich zum Schuljahresbeginn eine Erhebung an den Berufsschulen durch, bei der auch die Auszubildenden erfaßt werden. Abweichungen zur Statistik der zuständigen Stellen ergeben sich durch unterschiedliche Stichtage. Ferner wird auch ein geringer Teil der Auszubildenden an den Berufsschulen gar nicht erfaßt, da — je nach landesüblicher Regelung — nach Erreichen einer bestimmten Altersgrenze keine Berufsschulpflicht mehr besteht.

Die Angaben über die Auszubildenden sind vor allem wichtig, wenn Vergleiche mit der Anzahl berufsschulpflichtiger Jungarbeiter/-angestellten und arbeitsloser Jugendlicher gezogen werden sollen, da diese in der Berufsschulstatistik ebenfalls erfaßt werden<sup>2)</sup>.

*Berufsberatungs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weist die bei den Arbeitsämtern ratsuchenden Jugendlichen nach ihrem Berufswunsch, nach dem Ergebnis der Beratung und anderen Merkmalen für das jeweils abgelaufene Beratungsjahr (1. Oktober bis 30. September) aus. Ferner wird zum Stichtag 30. September die Anzahl der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 und unbesetzt gebliebenen Berufsausbildungsstellen ermittelt. Diese Angaben gehen nach der Definition des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es (BerBiFG) in die Ausbildungsplatzbilanz des Berufsbildungsberichts ein<sup>3)</sup>.

<sup>1)</sup> Vgl.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3, Berufliche Bildung (jährlich).

<sup>2)</sup> Vgl.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2, Berufliches Schulwesen (jährlich).

<sup>3)</sup> Vgl. Bundesanstalt für Arbeit,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onderhef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jährlich).

In der Beschäftigtenstatistik werden die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n in Ausbildung seit 1976 ausgewiesen. Dazu gehören Auszubildende, Anlernlinge, Praktikanten, Volontäre und Umschüler. Die Auswertungen werden zum 30. Juni erstellt, da zu diesem Zeitpunkt die Eintragung der Jahresmeldungen abgeschlossen ist. Wichtige Merkmale für die Auszubildenden sind die Staatsangehörigkeit und die Verteilung auf die Wirtschaftszweige sowie auf die Beschäftigtenberufe.<sup>1)</sup>

Zusätzliche Informationen für die Berechnung der Indikatoren zur regionalen Ausbildungsplatzsituation 1990/1991 (vgl. **Tabellen 2/1 ff.**)

*Berechnung der Indikatoren zur regionalen Ausbildungsplatzsituation*

Die Gegenüberstellung von regionalem Angebot an Ausbildungsplätzen und regionaler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wäre nur dann unproblematisch, wenn die Arbeitsamtsbezirke für die diese Analysen durchgeführt werden — abgeschlossene und unverbundene regionale Einheiten wären, d.h. analog den nach Pendlerbeziehungen geschnittenen Arbeitsmarktregionen entsprechende Ausbildungsmarktregionen repräsentieren würden; wenn sich die regionalen Daten also nur auf jene Personengruppen beziehen würden, die aus der zu betrachtenden Region stammen. Leider ist diese Voraussetzung nicht erfüllt.

Die Arbeitsamtsbezirke sind keineswegs als abgeschlossene regionale Einheiten zu verstehen. Vielmehr existieren zwischen den Bezirken vielfältige Beziehungen, die sich im Bildungspendeln der jungen Menschen niederschlagen. Diese Pendlerbewegungen finden Eingang in die Daten über die regionalen Ausbildungsplätze, da diese Statistiken nicht nach dem Wohnortprinzip — wie die Daten über die Absolventen —, sondern nach dem Lernortprinzip ermittelt werden. So enthalten die Ausbildungsplätze in Einpendlerregionen, wie z. B. in Hamburg, Auszubildendenanteile, die aus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angrenzender Regionen stammen. In Auspendlerregionen, wie z. B. in Bad Oldesloe, werden hingegen die Ausbildungsplätze nicht gezählt, die von den jungen Menschen aus Bad Oldesloe in Hamburg besetzt werden. Somit werden also in Hamburg bezogen auf die Hamburger jungen Menschen „zu viele“ und in Bad Oldesloe bezogen auf die dortigen Ausbildungsnachfrager „zu wenig“ Plätze gezählt.

Aus all dem folgt, daß für eine Gegenüberstellung von Angebot und Nachfrage bei den Lernortbezogenen Daten Pendlerkorrekturen notwendig sind. Diese Korrekturen werden mit Hilfe der Pendlerzahlen auf der Basis der Vermittlungs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vorgenommen. Aus dieser Statistik lassen sich Informationen über Wohnort und Ausbildungsort ablesen.

## 10.2 Vorbereitung des Berufsbildungsberichtes 1992 durch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u. a.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eitet im Rahmen seiner gesetzlichen Aufgaben und nach Weisung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die statistischen Daten zum Teil I auf und erstellt Entwürfe für den größten Teil der Beiträge zu Teil II des Berufsbildungsberichtes (Informationen und Daten zur beruflichen Bildung). Für den Berufsbildungsbericht 1992 haben folgende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Beiträge geleistet:

Adler, Tibor	Kutscha, Jürgen
Dr. Alex, Laszlo	Kutt, Konrad
Althoff, Heinrich	Meifort, Barbara
Balli, Christel	Menk, Angela
Bardeleben, Richard von	Neuber, Reinhold
Beicht, Ursula	Paulini, Hannelore
Berger, Klaus	Paulsen, Bent
Bergmann, Manfred	Podeszfa, Helena
Blume, Dieter	Dr. Pütz, Helmut
Breitsprecher, Günter	Dr. Ramlow, Elke
Clauß, Thomas	Dr. Sauter, Edgar
Dr. Csongar, Gabriele	Dr. Schenkel, Peter
Damm-Rüger, Sigrid	Schiemann, Manfred
Degen, Ulrich	Schmidt-Hackenberg, Brigitte
Dr. Dehnbestel, Peter	Schöngen, Klaus
Drochner, Ilse	Scholz, Dietrich
Dr. Feller, Gisela	Schulte, Barbara
Gewande, Wolf-Dieter	Schulz, Winfried
Harke, Dietrich	Dr. Schweikert, Klaus
Hecker, Oskar	Selka, Reinhard
Herget, Hermann	Stamm, Ida
Hoch, Hans-Dieter	Steinborn, Hans-Christian
Jander, Frank	Stiller, Ingrid
Jansen, Rolf	Stockmann, Rita
Dr. Kau, Wienand	Storm, Uwe
Kemp, Tomas	Tillmann, Heinrich
Keune, Saskia	Troltsch, Klaus
Kielwein, Kurt	Weilnböck-Buck, Inge
Klähn, Margitta	Weiß, Dieter
Dr. Kloas, Peter-Werner	Dr. Werner, Rudolf
Dr. Koch, Richard	Westhoff, Gisela
Dr. Kramer, Horst	Zielke, Dietmar
Krampe, Marion	Dr. Zimmer, Gerhard
Kühn, Günter	
Kurka, Sigrid	

Vom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wurden weitere Beiträge geleistet von:

Chaberny, Annelore	Parmantier, Klaus
Engelbrech, Gerhard	Schober, Karen

Außerdem haben Herr Dr. Georg Dicke von der Carl Duisberg Gesellschaft e.V. und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owie das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an der Erstellung des Berufsbildungsberichtes mitgewirkt.

Die Verantwortung für die im Berufsbildungsbericht veröffentlichten Fassungen der Beiträge liegt beim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sup>1)</sup> Vgl. Bundesanstalt für Arbeit,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jährlich).

**Tabelle 1/4: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bildungsberufen und ausgewählten Berufsgruppen im alten Bundesgebiet 1976, 1990 und 1991**

Berufs-kenn-ziffer	Ausbildungsberuf/Berufsgruppe	1976	1990	1991	Veränderung		
		Anzahl			1990 zu 1976	1991 zu 1976	1991 zu 1990
					Prozent		
2811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28024	23240	25043	- 17,1	- 10,6	7,8
6820	Verkäufer/Verkäuferin	36189	12499	11101	- 65,5	- 69,3	- 11,2
3110	Energieelektroniker/Energieelektronikerin Anlagentechnik/Betriebstechnik (Elektroanlageninstallateur/Elektroanlageninstallateurin) <sup>3)</sup>	18464	22937	22274	24,2	20,6	- 2,9
7812	Industriekaufmann/Industriekauffrau	20090	25459	25340	26,7	26,1	- 0,5
9011	Friseur/Friseurin	20635	20183	18540	- 2,2	- 10,2	- 8,1
6811	Kaufmann/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16278	19468	20330	19,6	24,9	4,4
7810	Bürokaufmann/Bürokauffrau	18747	27575	24578	47,1	31,1	- 10,9
2730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Maschinen- und Systemtechnik (Maschinenschlosser/Maschinenschlosserin) <sup>3)</sup>	11468	9337	8656	- 18,6	- 24,5	- 7,3
6910	Bankkaufmann/Bankkauffrau und Sparkassenkaufmann/Sparkassenkauffrau	14832	23825	24579	60,6	65,7	3,2
6812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Einzelhandelskaufmann/Einzelhandelskauffrau) <sup>3)</sup>	16206	28227	29097	74,2	79,5	3,1
5110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8661	9791	9535	13,0	10,1	- 2,6
2621	Gas- und Wasserinstallateur/Gas- und Wasserinstallateurin	6290	6844	6968	8,8	10,8	1,8
2910	Werkzeugmacher/Werkzeugmacherin Stanz- und Umformtechnik (Werkzeugmacher/Werkzeugmacherin) <sup>3)</sup>	5720	4003	3788	- 30,0	- 33,8	- 5,4
5010	Tischler/Tischlerin	8749	12306	12552	40,7	43,5	2,0
6350	Technischer Zeichner/Technische Zeichnerin	4093	4302	3830	5,1	- 6,4	- 11,0
4410	Maurer (ungestuft) <sup>1)</sup>	8621	—	—	—	—	—
6821	Fachverkäufer/Fachverkäuferin im Nahrungsmittelhandwerk	8672	9515	7759	9,7	- 10,5	- 18,5
4010	Fleischer/Fleischerin	5484	2912	2664	- 46,9	- 51,4	- 8,5
3911	Bäcker/Bäckerin	5971	5885	5347	- 1,4	- 10,5	- 9,1
2740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Betriebstechnik (Betriebsschlosser/Betriebsschlosserin) <sup>3)</sup>	5844	8033	7673	37,5	31,3	- 4,5
7810	Kaufmann/Kauffrau für Bürokommunikation (Bürogehilfe/Bürogehilfin)	6676	5216	5685	- 21,9	- 14,8	9,0
2710	Metallbauer/Metallbauerin	4713	6451	5914	36,9	25,5	- 8,3
4110	Koch/Köchin	5459	8171	8832	49,7	61,8	8,1
2622	Zentralheizungs- und Lüftungsbauer/Zentralheizungs- und Lüftungsbauerin	3991	4889	5058	22,5	26,7	3,5
3151	Radio- und Fernsehtechniker/Radio- und Fernsehtechnikerin	2894	3116	3003	7,7	3,8	- 3,6
6352	Bauzeichner/Bauzeichnerin	3052	4308	4684	41,2	53,5	8,7
2850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Produktionstechnik (Mechaniker/Mechanikerin) <sup>3)</sup>	3432	2212	2088	- 35,5	- 39,2	- 5,6
2821	Landmaschinenmechaniker/Landmaschinenmechanikerin	2936	1685	1567	- 42,6	- 46,6	- 7,0
* 1	Rest: Gewerbliche Berufe im Handwerk	35162	30045	30188	- 14,6	- 14,1	0,5
* 2	Sonstige Auszubildende im Handwerk	922	1072	1200	15,7	30,2	12,5
* 3	Gewerbliche/industrielle Berufe in Industrie und Handel	53138	47674	44614	- 10,3	- 16,0	- 6,4
* 4	Kaufmännische/sonstige Berufe in Industrie und Handel	21734	27554	28177	26,8	29,6	2,3
7813	Rechtsanwalts- und Notargehilfe/Rechtsanwalts- und Notargehilfin	7250	8355	8788	15,2	21,2	5,2
7535	Fachgehilfe/Fachgehilfin in wirtschafts- und steuerberatenden Berufen	7729	9088	10066	17,6	30,2	10,8
8561	Arzthelfer/Arzthelferin	16119	16600	17442	3,0	8,2	5,1
8562	Zahnarzthelfer/Zahnarzthelferin	9762	11134	12655	14,1	29,6	13,7
9211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im städtischen Bereich	3693	2502	2257	- 32,3	- 38,9	- 9,8
6851	Apothekenhelfer/Apothekenhelferin	4760	3806	4148	- 20,0	- 12,9	9,0
* 5	Landwirtschaftliche Berufe (ohne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13719	11038	10853	- 19,5	- 20,9	- 1,7
9211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im ländlichen Bereich	3527	666	658	- 81,1	- 81,3	- 1,2
3120	Kommunikationselektroniker/Kommunikationselektronikerin	4722	3687	3381	- 21,9	- 28,4	- 8,3
* 6	Techniker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672	1014	1027	50,9	52,8	1,3
* 7	Verkehrs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sup>2)</sup>	3360	4193	3752	24,8	11,7	- 10,5
* 8	Verwaltungs- und Büro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6845	10511	11731	53,6	71,4	11,6
* 9	Sonstige 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488	999	1033	104,7	111,7	3,4
* 10	Textilherstellende und -verarbeitende Berufe	—	7119	5741	—	—	- 19,4
8563	Tierarzthelfer/Tierarzthelferin	—	735	816	—	—	11,0
* 11	Stufenausbildung in der Bauwirtschaft	—	15736	16064	—	—	2,1
* 12	Berufe im Hotel- und Gaststättengewerbe (Gästekontrollanten)	—	13878	14915	—	—	7,5
	Behinderten-Ausbildungsberufe nach § 48 BBIG und § 42b HwO	—	5772	4261	—	—	- 26,2
	<b>Insgesamt</b>	<b>495793</b>	<b>545562</b>	<b>540252</b>	<b>10,0</b>	<b>9,0</b>	<b>- 1,0</b>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Tabelle 1/4, Seite 176

<sup>1)</sup> Maurer (ungestuft) incl. Stufenausbildung in der Bauwirtschaft für 1976, ab 1979 getrennte Erfassung, ab 1983 erfaßt in Berufsklasse 11.

<sup>2)</sup> Einschließlich Matrose, Schiffsbaumechaniker/Schiffsbaumechanikerin

<sup>3)</sup> in Klammern Berufsbezeichnung vor Neuordnung 1. August 1987, für Bürogehilfen 1. August 1991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0. September

Die zusammengefaßten Berufsgruppen bestehen u.a. aus folgenden Ausbildungsberufen (Berufsklassen):

\* 1: 2510, 2610, 2910, 3114, 3920, 4520, 4850,  
 \* 2: 6350, 6812, 7810, 7812  
 \* 3: 2210, 2721, 2811, 3120, 6324, 6330, 9350

\* 4: 0531, 6841, 6940, 7011, 7022  
 \* 5: 0110, 0121, 0510, 0621, 8382  
 \* 6: 6230, 6236, 6241, 6311, 6354, 6359

\* 7: 7161, 7322  
 \* 8: 7811, 7822  
 \* 9: 4652, 8232, 8762, 9350

\* 10: 3441, 3510, 3512, 3520, 3551  
 \* 11: 4410, 4420, 4511, 4620, 4811, 4830  
 \* 12: 9113, 9122, 9133

Tabelle 1/4: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nach Ausbildungsberufen und ausgewählten Berufsgrupp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1

Berufskennziffer	Ausbildungsberuf/Berufsgruppe	1991	
		Anzahl	
2811	Kraftfahrzeugmechaniker/Kraftfahrzeugmechanikerin	2 310	
6820	Verkäufer/Verkäuferin	953	
3110	Energieelektroniker/Energieelektronikerin Anlagentechnik/Betriebstechnik (Elektroanlageninstallateur/Elektroanlageninstallateurin) <sup>2)</sup>	3 545	
7812	Industriekaufmann/Industriekauffrau	943	
9011	Friseur/Friseurin	1 810	
6811	Kaufmann/Kauffrau im Groß- und Außenhandel	739	
7810	Kaufmann/Kauffrau für Bürokommunikation (Bürokaufmann/Bürokauffrau)	1 682	
2730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Maschinen- und Systemtechnik (Maschinenschlosser/Maschinenschlosserin) <sup>3)</sup>	525	
6910	Bankkaufmann/Bankkauffrau und Sparkassenkaufmann/Sparkassenkauffrau	2 666	
6812	Kaufmann/Kauffrau im Einzelhandel (Einzelhandelskaufmann/Einzelhandelskauffrau) <sup>3)</sup>	3 469	
5110	Maler und Lackierer/Malerin und Lackiererin	2 170	
2621	Gas- und Wasserinstallateur/Gas- und Wasserinstallateurin	2 123	
2910	Werkzeugmacher/Werkzeugmacherin Stanz- und Umformtechnik (Werkzeugmacher/Werkzeugmacherin) <sup>1)</sup>	267	
5010	Tischler/Tischlerin	1 917	
6350	Technischer Zeichner/Technische Zeichnerin	126	
6821	Fachverkäufer/Fachverkäuferin im Nahrungsmittelhandwerk	996	
4010	Fleischer/Fleischerin	495	
3911	Bäcker/Bäckerin	1 200	
2740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Betriebstechnik (Betriebsschlosser/Betriebsschlosserin) <sup>3)</sup>	2 521	
7810	Bürogehilfe/Bürogehilfin	749	
2710	Metallbauer/Metallbauerin	736	
4110	Koch/Köchin	1 272	
2622	Zentralheizungs- und Lüftungsbauer/Zentralheizungs- und Lüftungsbauerin	1 501	
3151	Radio- und Fernsehtechniker/Radio- und Fernsehtechnikerin	77	
6352	Bauzeichner/Bauzeichnerin	202	
2850	Industriemechaniker/Industriemechanikerin Produktionstechnik (Mechaniker/Mechanikerin) <sup>3)</sup>	283	
2821	Landmaschinenmechaniker/Landmaschinenmechanikerin	199	
* 1	Rest: Gewerbliche Berufe im Handwerk	4 914	
* 2	Sonstige Auszubildende im Handwerk	283	
* 3	Gewerbliche/industrielle Berufe in Industrie und Handel	5 757	
* 4	Kaufmännische/sonstige Berufe in Industrie und Handel	1 989	
7813	Rechtsanwalts- und Notargehilfe/Rechtsanwalts- und Notargehilfin	543	
7535	Fachgehilfe/Fachgehilfin in wirtschafts- und steuerberatenden Berufen	927	
8561	Arztgehilfe/Arztgehilfin	624	
8562	Zahnarztgehilfe/Zahnarztgehilfin	3 474	
9211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im städtischen Bereich	1 180	
6851	Apothekengehilfe/Apothekengehilfin	355	
* 5	Landwirtschaftliche Berufe (ohne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1 341	
9211	Hauswirtschaftler/Hauswirtschaftlerin im ländlichen Bereich	780	
3120	Kommunikationselektroniker/Kommunikationselektronikerin	956	
* 6	Techniker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43	
* 7	Verkehrs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sup>2)</sup>	604	
* 8	Verwaltungs- und Büro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1 723	
* 9	Sonstige 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351	
* 10	Textilherstellende und -verarbeitende Berufe	833	
8563	Tierarztgehilfe/Tierarztgehilfin	18	
* 11	Stufenausbildung in der Bauwirtschaft	10 347	
* 12	Berufe im Hotel- und Gaststättengewerbe (Gästekontakthelfer)	1 325	
	Behinderten-Ausbildungsberufe nach § 48 BBiG und § 42b HwO	732	
	<b>Neue Länder insgesamt</b>	<b>74 575</b>	

Die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geben auf Grund von Untererfassungen lediglich Teilergebnisse wieder. Da sich der Erfassungsfehler nicht auf die Berufe aufschlüsseln läßt, ist eine statistische Analyse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icht möglich.

<sup>2)</sup> Einschließlich Matrose, Schiffsbaumechaniker/Schiffsbaumechanikerin <sup>3)</sup> in Klammern Berufsbezeichnung vor Neuordnung 1. August 1987, für Bürogehilfen 1. August 1991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0. September

Die zusammengefaßten Berufsgruppen bestehen u. a. aus folgenden Ausbildungsberufen (Berufsklassen):

\* 1: 2510, 2610, 2910, 3114, 3920, 4520, 4850,  
\* 2: 6350, 6812, 7810, 7812  
\* 3: 2210, 2721, 2811, 3120, 6324, 6330, 9350

\* 4: 0531, 6841, 6940, 7011, 7022  
\* 5: 0110, 0121, 0510, 0621, 8382  
\* 6: 6230, 6236, 6241, 6311, 6354, 6359

\* 7: 7161, 7322  
\* 8: 7811, 7822  
\* 9: 4652, 8232, 8762, 9350

\* 10: 3441, 3510, 3512, 3520, 3551  
\* 11: 4410, 4420, 4511, 4620, 4811, 4830  
\* 12: 9113, 9122, 9133

**Tabelle 1/5: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1991 nach Bundesländern und Bere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undesland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Ins- gesamt	Davon im Bereich						
		Industrie und Handel	Handwerk	Öffentlicher Dienst	Landwirt- schaft	Freie Berufe	Hauswirt- schaft	Seeschiff- fahrt
absolut								
Berlin (Ost)	2 959	1 731	705	262	22	227	12	—
Brandenburg	14 008	7 985	4 285	586	220	889	43	—
Mecklenburg-Vorpommern	11 032	4 545	4 692	381	437	669	302	6
Sachsen <sup>1)</sup>	21 525	9 553	7 858	788	1 034	1 805	487	—
Sachsen-Anhalt	11 768	4 986	4 443	1 030	191	1 098	20	—
Thüringen <sup>2)</sup>	13 283	4 413	5 996	624	363	1 253	634	—
<b>Neue Länder</b>	<b>74 575</b>	<b>33 213</b>	<b>27 979</b>	<b>3 671</b>	<b>2 267</b>	<b>5 941</b>	<b>1 498</b>	<b>6</b>

<sup>1)</sup> Ohne das sächsische Gebiet des Arbeitsamtsbezirkes Altenburg

<sup>2)</sup> Einschließlich des sächsischen Gebietes des Arbeitsamtsbezirkes Altenburg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rhebung zum 30. September

Die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geben auf Grund von Untererfassungen lediglich Teilergebnisse wieder. Da sich der Erfassungsfehler nicht auf die Regionen aufschlüsseln läßt, ist eine statistische Analyse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icht möglich.

**Tabelle 1/6: Schulabgänger aus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sowie aus Fachoberschulen und Fachgymnasi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0 bis 1992<sup>1)</sup>**

Land	Jahr	Schulabgänger							
		Insgesamt	Zusammen	Davon			Zusammen	Davon mit	
				Nach Beendigung der Vollzeitschulpflicht Ohne Hauptschulabschluß	Mit	Mit Realschul- oder gleichwertigem Abschluß		Fachhochschulreife <sup>2)</sup>	Allgemeiner und fachgebundener Hochschulreife <sup>2)</sup>
Schleswig-Holstein	1990	30687	20044	2616	8964	8464	10643	2561	8082
	1991	28524	19051	2543	8552	7956	9473	1897	7576
	1992	27593	18816	2524	8632	7660	8777	1873	6904
Hamburg	1990	18797	9569	1290	3568	4711	9228	2957	6271
	1991	17177	9599	1338	3550	4711	7578	1514	6034
	1992	16336	9320	1318	3432	4570	7016	1404	5612
Niedersachsen	1990	91784	60182	6845	19142	34195	31602	8067	23535
	1991	89592	59825	6837	19046	33942	29767	6954	22813
	1992	86196	58485	6788	18740	32957	27711	6530	21181
Bremen	1990	8029	4658	414	1249	2995	3371	1037	2334
	1991	7724	4555	247	2259	2049	3169	945	2224
	1992	7373	4514	251	2251	2012	2859	910	1949
Nordrhein-Westfalen	1990	211509	129113	12520	44446	72147	82396	27908	54488
	1991	190921	126122	12144	43202	70776	64799	13175	51624
	1992	184412	124460	12032	41868	70560	59952	12418	47534
Hessen	1990	64631	39643	5210	13756	20677	24988	5723	19265
	1991	62378	39340	5210	13453	20677	23038	4997	18041
	1992	61162	39528	5101	13357	21070	21634	4899	16735
Rheinland-Pfalz	1990	42267	28182	3500	13799	10883	14085	3714	10371
	1991	42033	28893	3714	14296	10883	13140	2770	10370
	1992	41828	29383	3819	14779	10785	12445	2770	9675
Baden-Württemberg	1990	119078	78029	8435	36807	32787	41049	7898	33151
	1991	107712	76231	8435	35960	31836	31481	292	31189
	1992	105750	76231	8435	35960	31836	29519	292	29227
Bayern	1990	129910	94520	9171	48279	37070	35390	10058	25332
	1991	128100	94596	9162	48327	37107	33504	9895	23609
	1992	124167	92619	9162	47796	35661	31548	9484	22064
Saarland	1990	11225	7204	712	3862	2630	4021	1735	2286
	1991	10765	6749	722	3484	2543	4016	1732	2284
	1992	10671	6933	697	3225	3011	3738	1637	2101
Berlin (West)	1990	18372	11721	2802	3628	5291	6651	1089	5562
	1991	18389	11813	2802	3635	5376	6576	976	5600
	1992	17886	11786	2813	3592	5381	6100	920	5180
Altes Bundesgebiet	1990	746289	482865	53515	197500	231850	263424	72747	190677
	1991	703315	476774	53154	195764	227856	226541	45177	181364
	1992	683374	472075	52940	193632	225503	211299	43137	168162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1, Tabelle 1/5, Seite 177

<sup>1)</sup> 1990: Ist-Zahlen, die Angaben für 1991 und 1992 sind Schätzung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die auf der Kurzzeitprognose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asieren, aus den Zahlen der Kultusminister-Konferenz wurden die Angaben über die Absolventen des 2. Bildungsweges vom Statistischen Bundesamt herausgeschätzt.

<sup>2)</sup> 1990: Einschließlich der Abgänger aus Berufsfachschulen, Fachschulen und Kollegschaften Nordrhein-Westfalen mit Fachhochschulreife bzw. Allgemeiner Hochschulreife (26807 Schulabgänge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1, Bildung und Kultur, Reihe 2, Berufliches Schulwesen 1992, Vorabmeldung, Berechnung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noch Tabelle 2/2: Gesamtangebot und Gesamtnachfrage nach Arbeitsamtsbezirken in den neuen Ländern 1991**

Arbeitsamtsbezirk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Unbesetzte Plätze
	1991	1991	1991
<b>Berlin (Ost)</b>	<b>2959</b>	<b>181</b>	<b>397</b>
Cottbus	3979	155	397
Eberswalde	2333	145	95
Frankfurt/Oder	3531	129	207
Neuruppin	1468	25	113
Potsdam	2697	83	470
<b>Brandenburg</b>	<b>14008</b>	<b>507</b>	<b>1282</b>
Neubrandenburg	3004	135	283
Rostock	3299	100	105
Schwerin	2663	196	242
Stralsund	2066	64	283
<b>Mecklenburg-Vorpommern</b>	<b>11032</b>	<b>495</b>	<b>913</b>
Ansbach	1364	38	133
Bautzen	2573	52	116
Chemnitz	3801	61	219
Dresden	3401	34	235
Leipzig	3422	110	622
Oschatz	683	152	23
Pirna	1753	21	83
Plauen	1273	55	224
Riesa	942	9	17
Zwickau	2313	35	114
<b>Sachsen<sup>1)</sup></b>	<b>21525</b>	<b>567</b>	<b>1786</b>
Dessau	735	17	87
Halberstadt	1188	70	343
Halle	1874	140	138
Magdeburg	3841	41	196
Merseburg	1511	66	191
Sangerhausen	1032	44	39
Stendal	1174	12	125
Wittenberg	413	24	131
<b>Sachsen-Anhalt</b>	<b>11768</b>	<b>414</b>	<b>1250</b>
Altenburg	733	37	36
Erfurt	3086	29	215
Gera	2112	25	123
Gotha	1740	21	212
Jena	2036	28	31
Nordhausen	1543	44	115
Suhl	2033	73	248
<b>Thüringen<sup>2)</sup></b>	<b>13283</b>	<b>257</b>	<b>980</b>
<b>Neue Länder</b>	<b>74575</b>	<b>2421</b>	<b>6608</b>

Die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gehen auf Grund von Untererfassungen lediglich Teilergebnisse wieder. Da sich der Erfassungsfehler nicht auf die Regionen aufschlüsseln läßt, ist eine statistische Analyse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nicht möglich.

<sup>1)</sup> Ohne das sächsische Gebiet des Arbeitsamtsbezirkes Altenburg

<sup>2)</sup> Einschließlich des sächsischen Gebietes des Arbeitsamtsbezirkes Altenburg



**Tabelle 8/1: Mittel des Bundes nach Ressorts (Haushaltsansätze)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im Jahre 1991**

Ressort	Zweckbestimmung	Haushaltsansatz in Mio. DM	Erläuterungen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113,0	
	Förderung von Schülern in berufs- bildenden Schulen	297,0 <sup>1)</sup>	§§ 2, 68 BAföG
	Förderung von Versuchs- und Modell- richtungen und -programmen (Modellver- suche)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und deren wissenschaftliche Begleitunter- suchungen	28,5	Art. 91 GG und Rahmenvereinbarung Modellversuche des Bundes und der Länder § 6 Abs. 2 Nr. 1 d BerBifG
	Förderung von Innovations-Transfer- Maßnahmen	3,5	
	Förderung der Forschung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4,5	
	Begabtenförderung in der beruflichen Bildung	10,0	
	Qualifizierung von Personal der beruflichen Bildung in dem in Art.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20,0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39,2	
	Austausch von Fachkräften, Auszubilden- den und Fortbildungsteilnehmern mit dem Aus- land	16,0	
	Förder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in dem in Art.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75,0	Ausbildungsplatzinitiative
	Modernisierung und Ausstattung beruflicher Bildungsstätten in dem in Art.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8,0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Errichtung oder Ausbau von Ausbildungs-, Fortbildungs- und Umschulungsstätten	5,0 <sup>1) 2)</sup>	§ 1 Abs. 1 Nr. 1 und 2 c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Förderung zusätzlicher betrieblicher Ausbildungsplätze	2,8 <sup>1) 2)</sup>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 struktur“
	Förderung von Lehrgängen der überbetrieb- lichen beruflichen Bildung im Handwerk	56,0	Gewerbeförderungsprogramm
	Zuschüsse für den Bau und die Ausstattung Fortbildungsstätten in Handwerk und Handel	122,8	Gewerbeförderungsprogramm
	Förderung der „Stiftung für Begabtenförde- rung im Handwerk“	0,9	Gewerbeförderungsprogramm
	Maßnahmen de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Leistungssteigerung i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und bei freiberuflich Tätigen	46,3 <sup>1)</sup>	Gewerbeförderungsprogramm
	Errichtung oder Schaffung zusätzlicher Ausbildungskapazitäten bzw. Förderung richtungsweisender Kooperationsvorhaben bei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der gewerblichen Wirtschaft	8,0	ERP-Ausbildungsplätzeprogramm (Darlehen)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Maßnahmen der beruflichen Bildung junger Aus- länder, insbes. Berufsvorbereitungsmaßnahmen mit Internatsunterbringung	9,5	
Bundesminister für des Innern	Errichtung, Erweiterung, Ausstattung und Modernisierung von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Bildung	6,9	§ 6 Abs. 2 Zonenrandförderungsgesetz
	Bau und Einrichtung von Berufsschulen	1,5	
<b>Insgesamt</b>		<b>874,4</b>	

<sup>1)</sup> geschätzt

<sup>2)</sup> nur Bundesanteil

**Tabelle 8/2: Mittel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für berufliche Bildung in Mio DM 1980 bis 1991**

	Altes Bundesgebiet							Bundesgebiet
	1980	1982	1984	1986	1988	1989	1990	1991
<b>BUND:</b>								
— Programme u.ä. <sup>1)</sup>	397,0	495,0	749,0	750,0	250,7	309,4	352,7	577,4
— Ausbildungsförderung <sup>2)</sup>	230,0	740,0	150,0	150,0	140,0	143,0	140,3	297,0 <sup>1)</sup>
— Sonstiges <sup>1)</sup>	—	—	—	41,0	—	—	—	—
<b>LÄNDER:</b>								
— Programme <sup>1)</sup>	359,0	392,0	553,0	853,0	675,9	570,4	—*)	347,0**) <sup>1)</sup>
— Ausbildungsförderung <sup>2)</sup>	124,0	398,0	80,0	70,0	75,0	77,0	75,5	159,9 <sup>1)</sup>
<b>Bundesanstalt für Arbeit <sup>3)</sup>:</b>	2927,49	3842,97	3900,9	5465,22	7048,6	6430,6	7186,3	15539,4 <sup>1)</sup>
— Individuelle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sbildung	444,99	490,27	713,5	1003,02	1094,8	1012,0	919,0	1994,1 <sup>1)</sup>
• Berufsausbildungsbeihilfen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442,4	428,2	487,4	589,5	641,9	510,3	418,2	933,5 <sup>1)</sup>
•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mit allgemeinbildenden Inhalten	—	12,7	63,7	102,6	62,5	43,5	37,1	93,4 <sup>1)</sup>
• Berufsausbildung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2,59	49,37	162,40	310,92	364,7	412,0	422,8	605,4 <sup>1)</sup>
• Über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in Regionen mit überdurchschnittlichem Ausbildungsplatzdefizit	—	—	—	—	25,7	46,2	40,9	361,8 <sup>1)</sup>
— Individuelle Förderung der beruflichen								
• Fortbildung: Maßnahmekosten	484,0	627,5	806,5	1272,2	1671,5	2106,0	2221,9	6100,2 <sup>1)</sup>
• Umschulung: Maßnahmekosten	268,1	439,9	444,3	563,9	814,8	2106,0	2221,9	6100,2 <sup>1)</sup>
• Fortbildung/Umschulung Unterhaltsgeld	1497,8	2186,4	1784,2	2301,1	3049,7	3023,4	3612,7	6472,6 <sup>1)</sup>
— Institutionelle Förderung	46,5	28,6	29,7	39,9	44,8	33,8	12,1	200,0 <sup>1)</sup>
— Einarbeitungszuschüsse	186,1	70,3	122,7	285,1	373,0	255,4	420,6	772,5 <sup>1)</sup>

<sup>1)</sup> Soll-Zahlen

<sup>2)</sup> Geschätzte Ist-Zahlen

<sup>3)</sup> Ist-Zahlen

\*) nicht erfaßt

\*\*) ohne neue Länder

문서 번호 34

신연방주의 계속교육 [발췌]

1992 년 6 월

담당자 / 기관: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내용:

이 문서는 구동독의 할레 정신과병원의 의사 한스 요아힘 마츠박사와 사회학자 모니카 슈미트가 신연방주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다. 마츠박사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부문의 변혁은 신연방주 청소년들의 방향감각 상실 증세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교육 부문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구동독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겪은 변화를 소화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어야 한다. 서독에서 이미 확인된 것들을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학습경험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독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고하려고 한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한 바 없는 후견인 행세로 받아들일 것이고, 결국에는 동·서독지역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모니카 슈미트는 작센-안할트 주의 어느 작은 지역내 노동청 소속 직업전환조치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이 마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채 그곳 주민들과 대처해야 하는 식민지 경영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구동독지역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잘 협력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프로그램 그룹의 일하는 방식에 불만이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배워야 할 “사회교육학적 상담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직업적 요구조건이나 업무에 대해 수업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전달되어, 이후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출처: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29, Juni 1992



# **REPORT** 29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JUNI 1992**

**THEMA: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Wissenschaftliche Halbjahreszeitschrift

### **Herausgeber**

Horst Siebert, Hannover  
Johannes Weinberg, Münster  
Ekkehard Nuissl, Frankfurt  
Hans Tietgens, Frankfurt

### **Herausgebende Institution**

Pädagogische Arbeitsstelle des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Holzhausenstraße 21, 6000 Frankfurt 1, Telefon 069/1540050  
Die PAS versucht als wissenschaftlicher Dienstleistungsbetrieb zwischen Forschung und Berufspraxis zu vermitteln. Sie stellt den Volkshochschulen und ander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Hilfen für ihre Arbeit zur Verfügung. Sie wird mit Mittel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er Länder institutionell gefördert.

### **Erscheinungsweise**

Halbjährlich, jeweils im Juni und Dezember.

Für unverlangt eingesandte Manuskripte wird keine Gewähr übernommen.

### **Abonnement und Einzelhefte**

Ein Jahresabonnement kostet DM 24.00 incl. Versandkosten. Preis des Einzelheftes: DM 15.00 zuzüglich Versandkosten. Das Abonnement verlängert sich jeweils um ein Jahr, wenn es nicht bis zum 31. Oktober gekündigt wird.

### **Publikationsrechte**

Das Copyright liegt bei den Autoren. Beiträge sind urheberrechtlich nach § 54 UrhG geschützt. Alle Rechte, auch der Übersetzung, vorbehalten. Nachdruck und Reproduktion nur mit Genehmigung der herausgebenden Institution.

Herausgeber der vorliegenden Nummer 29: Horst Siebert, Hannover

Koordination der Rezensionen: Christa Brechler, Frankfurt

CIP-Kurztitelaufnahme der Deutschen Bibliothek

###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

wissenschaftliche Halbjahreszeitschrift / herausgebende

Institution: Pädag. Arbeitsstelle d. Dt. Volkshochsch.-Verb. –

Frankfurt [Main] : Pädag. Arbeitsstelle.

Erscheint halbjährl. – Nebent.: Pädagogische Arbeitsstelle < Frankfurt,

Main, 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Report. – Früher verl. von

dvv, Dr.– Vervielfältigungs- u. Vertriebs-GmbH, Münster, danach

von d. AfeB, Heidelberg. – Aufnahme nach Nr. 25 (1990)

ISSN 0177–4166

NE: Pädag. Arbeitsstelle <Frankfurt, Main, 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Report

Nr. 29 (1992) –

Verl.-Wechsel

Inhaltsverzeichnis

Editorial ..... 7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11

*Maria von Fransecky/Hans-Joachim Maaz* ..... 13  
Von den Mühen des Zusammenwachsens nach der Vereinigung

*Matthias Trier* ..... 18  
Lernangebote und Lernverhalten in der betrieblichen Erwachsenenbildung

*Monika Schmidt* ..... 27  
„Wenn mir jemand vor einem Jahr gesagt hätte, daß ich hier sitze, ich hätte es nicht geglaubt.“

*Sylvia Kade* ..... 40  
Erinnerung: Zur Gegenwart des Holocaust in Deutschland-West und Deutschland-Ost. Ein Tagungsbericht

**SELBSTDARSTELLUNGEN AUS DER FORSCHUNG.** ..... 49

*Reinhard Romberg* ..... 51  
Bedürfnisse, Erwartungen, Kalküle – was steuert das Lernen Erwachsener?

**NACHRICHTEN.** ..... 75  
Essener Frauenstudienprojekt ..... 77  
Orientierungsleitfaden Kontaktstudium Erwachsenenbildung ..... 78

*Erhard Schlutz* ..... 79  
Odyssee in die Zukunft oder humaner Pragmatismus

**REZENSIONEN.** ..... 85  
**DAS BUCH IN DER DISKUSSION** ..... 87  
Armin Born: Geschichte der Erwachsenenbildungsforschung (Rudolf Tippelt, Gabriele Botte, Klaus Körber)

SAMMELBESPRECHUNGEN .....	97
Revidierte SESTMAT-Einheiten (Fiedler)	
Literatur aus Österreich (Schmidt)	
KURZINFORMATIONEN .....	102
<b>AUTOREN/-INNEN.</b> .....	125



## Editorial

Dieser REPORT 29 sollte ein Heft *über* die neuen Bundesländer und *aus* den neuen Ländern werden. Wir wollten verzichten auf die Erfolgsberichte westdeutscher Einrichtungen und Verbände, die in der ehemaligen DDR ihre Filialen errichtet haben. Wir waren interessiert an ermutigenden und leidvollen Bildungserfahrungen und Bildungsinitiativen von Personen, die die Wende miterlebt haben. Deshalb wurden zahlreiche Kollegen/innen aus der Bildungspraxis und aus der Wissenschaft um Beiträge gebeten. Die Resonanz und der Rücklauf waren jedoch so gering, daß wir als Herausgeber den Eindruck gewannen, auch dies sei symptomatisch für die 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Einige Ursachen für das mangelnde Interesse, Aufsätze für eine wissenschaftliche Zeitschrift zu schreiben, liegen auf der Hand. Viele Kollegen/innen in der Bildungspraxis haben nur befristete Verträge, ihre Zukunft ist ungewiß, und sie müssen sich in neue Aufgabenfelder einarbeiten und zählbare Erfolge nachweisen. Andere – z.B. Leiter/innen von Volkshochschulen – sind vollauf mit der organisatorischen Umstrukturierung und finanziellen Absicherung ihrer Einrichtung beschäftigt. Möglicherweise wollen sie auch den Eindruck vermeiden, sie würden zu wenig arbeiten und statt dessen Aufsätze schreiben. Deprimierend ist die Lebenslage vieler Hochschullehrer/innen. Die meisten von ihnen sind „abgewickelt“ worden und haben bestenfalls eine Beschäftigung auf dem „Bildungsmarkt“ gefunden, die oft unter ihrem intellektuellen Niveau ist. Das Schreiben von Aufsätzen erscheint so als eine zusätzliche Belastung, die außerdem nicht karriererelevant ist. Außerdem ist eine solche publizistische Tätigkeit finanziell nicht lukrativ. Setzt man sich kritisch mit den derzeitigen Bildungsangeboten und seinen Arbeitgebern auseinander, verschlechtert man möglicherweise sogar seine Berufsaussichten.

Doch es scheint noch weitere, weniger offensichtliche Schreibhemmnisse zu geben. Die politische Wende ist im sozialwissenschaftlich-theoretischen Bereich mit einem Paradigmenwechsel verbunden. Wer früher wissenschaftliche Beiträge zur Erwachsenenbildung der DDR schrieb, bewegte sich in einem vorgegebenen Rahmen mit eindeutigen Regeln und Erwartungen und einem Repertoire an sprachlichen Topoi und Formeln. Die offiziellen Richtziele, Begründungen und Legitimationen der Erwachsenenbildung waren weitgehend festgelegt und konnten zumindest in Veröffentlichungen kaum problematisiert werden. Die wissenschaftlich-didaktische Diskussion konzentrierte sich auf geeignete Mittel für vorgegebene Zwecke. Die Sprache war weitgehend normiert und dualisierend.

Die westdeutsche Erwachsenenbildungstheorie, die nun auch für Ostdeutschland maßgebend ist, ist nicht „besser“ oder „schlechter“, sondern anders, nämlich eher diskursiv und offen. Die westdeutsche Theorie befaßt sich vor allem mit Relationen, Mehrdeutigkeiten, Ambivalenzen und Polyvalenzen. Darauf verweisen auch Schlüs-

selbegriffe wie Gegensteuerung, neue Unübersichtlichkeit, Kontingenz, Suchbewegung ... Ernstzunehmende Erwachsenenbildungstheorie ist immer auch Ideologiekritik.

Kollegen/innen aus der ehemaligen DDR können nun den gewohnten Sprachcode und die jahrzehntelang gültigen kognitiven Schemata und normativen Orientierungen nicht von heute auf morgen vergessen und ersetzen. Sie merken aber auch, daß die sozialistischen Sprach- und Denkmuster der neuen marktwirtschaftlichen Bildungswirklichkeit nicht mehr entsprechen. Hinzu kommt, daß die meisten die mit der politischen Wende verbundene Identitätskrise und Neuorientierung noch nicht abgeschlossen haben. Die Fragen, welche Sozialisationsinhalte und Deutungsmuster der DDR, welche Errungenschaften der sozialistischen Erwachsenenbildung noch Bestand haben und wovon man sich lebensgeschichtlich verabschieden muß, sind für viele noch nicht endgültig beantwortet. Einige haben sehr schnell – oft schneller als manche Westdeutschen – den neuen Jargon und das marktwirtschaftliche Denken verinnerlicht: Von Bildungsmanagement, Marketing, Coaching, Controlling u.ä. scheint in den neuen Ländern häufiger die Rede zu sein als in den westlichen „Herkunftsländern“.

Unsicher und verunsichert sind einige ostdeutsche Kollegen/innen aber auch im Blick auf westdeutsche Reaktionen. Sie befürchten, mit ihren theoretischen Beiträgen den westlichen Standards nicht zu entsprechen und insgeheim belächelt zu werden. Auch manche westlichen Kommentierungen werden als Abwertung wahrgenommen. In der Tat neigen wir Westdeutschen dazu, unsere Maßstäbe und wissenschaftlichen Muster vorschnell zu verabsolutieren. Zu Recht reagieren ostdeutsche Kollegen/innen empfindlich auf die neuen Zensoren, die nun frühere Kontrolleure ablösen. Publizieren „im Westen“ verspricht so gesehen nicht nur Erfolgserlebnisse, sondern birgt auch Gefahren für die ohnehin schon überstrapazierte Psychohygiene in sich.

Eine weitere Schreibbarriere liegt in dem Entwicklungstempo begründet. Was geschrieben steht, ist auch festgeschrieben, selbst wenn die Zeiten sich geändert haben. Dies ist ein generelles Problem wissenschaftlichen Publizierens, das aber verstärkt für die Erwachsenen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gilt. Zur Zeit werden in einigen neuen Ländern gerade Erwachsenenbildungsgesetze verabschiedet, d.h., wenn dieser REPORT erscheint, werden viele Bestandsaufnahmen und Analysen von heute bereits der Schnee von gestern sein.

Wir, die westlichen Herausgeber des REPORT, vermuten also tieferliegende Ursachen dafür, daß in diesem Heft weniger Originaltöne aus den neuen Ländern zu hören sind als geplant. Das heißt jedoch keineswegs, daß die abgedruckten Beiträge weniger lesenswert wären.

Ansonsten sind wir dabei, das Herausgeberteam „aufzufrischen“. Die Senioren werden sich allmählich zurückziehen und jüngeren Kollegen/innen Platz machen. Als

erste wird Frau Prof. Hannelore Faulstich-Wieland vom nächsten Heft an Mitherausgeberin des REPORT sein. Schwerpunktthema des REPORT 30 wird der Stand der Theoriediskussion unserer Disziplin sein. Die redaktionelle Leitung werden H. Tietgens und J. Weinberg übernehmen. Der in dem hier vorgelegten Heft 29 enthaltene Beitrag von Reinhard Romberg ist als vorbereitender Anreiz für das Rahmenthema von Heft 30 gedacht.

Übrigens wurde vereinbart, daß die Tagungsberichte der Kommission Erwachsenenbildung der DGfE demnächst als Beiheft des REPORT erscheinen. Vorgesehen ist ferner eine stärkere Beachtung der Erwachsenenbildung in Österreich.

Ekkehard Nuissl  
Horst Siebert  
Hans Tietgens  
Johannes Weinberg

Frankfurt/M., Juni 1992

## **Von den Mühen des Zusammenwachsens nach der Vereinigung**

*Über Schwierigkeiten und Erfordernisse im deutschen Zusammenleben sprach Maria von Fransecky, Mitarbeiterin der Evangelischen Berufsschularbeit, mit dem Autor und Chefarzt der Psychotherapeutischen Klinik im Evangelischen Diakoniewerk Halle, Dr. Hans-Joachim Maaz.*

Frage: In zunehmend mehr Bereichen kommt es in der Jugendarbeit zu Begegnungen zwischen Ost- und Westjugendlichen. Wir wachsen zusammen, könnte man meinen, und das ist gut so. Dennoch tritt mit der neugewonnenen Nähe Widersprüchlichkeit und Trennendes erst hervor. Während sich der Alltag für junge Menschen im Westteil nach der Wende kaum veränderte, müssen Jugendliche aus der ehemaligen DDR sich umfassend neu orientieren. Das hinterläßt Spuren. Trotz vielfacher Bejahung der Vereinigung zeichnet sich ein deutliches Bild von Erschöpfung in den Lebenslagen.

Während eines Seminars zur Politischen Bildung beschrieb ein Auszubildender sein Befinden: „Ich komme mir vor wie auf einem Karussell, was immer schneller wird und nicht anhalten will. Mir fehlt der Halt, und ich habe keinen Boden mehr unter den Füßen. Ich weiß nicht, womit ich mich identifizieren soll. Irgendwo ist man ohne Orientierung, ohne Ziel und ohne Sinn. Wer weiß, wann das Karussell abstürzen wird?“

Was kann nun pädagogische Arbeit in Bildungseinrichtungen oder Gemeinden leisten, um die Kluft zwischen den Menschen nicht noch tiefer werden zu lassen?

Maaz: Die Schilderung des jungen Mannes, den Sie zitieren, macht auf etwas aufmerksam, was ich für das wesentliche Problem halte: die momentane Orientierungslosigkeit oder den Verlust an Orientierung, vor allen Dingen den Verlust an Werten und damit auch an Identität. Das, was unser Leben bestimmt hat, im Guten wie im Schlechten, erscheint verloren, es stimmt nicht mehr, und das erzeugt eine große Unsicherheit. Es entsteht eine innere Leere, so wie der Jugendliche es beschreibt. Diese Labilisierung durch Orientierungslosigkeit, Sinnentleerung und Identitätsbrüche führt nach meiner Beobachtung zu unterschiedlichen Reaktionen. Manche Menschen stürzen sich in eine Art Flucht nach vorn, sie reagieren überaktiv, um vor der Leere, diesem inneren Vakuum zu fliehen, andere reagieren eher geschockt. Sie fühlen sich pessimistisch und lethargisch, so daß sie mit der Fülle und Vielfalt neuer Orientierungsmöglichkeiten nichts anzufangen wissen. Für mich ist das ein Hinweis darauf, wie die bisherige Sozialisation, die ja auf Anpassung und Unterordnung orientierte, nachhaltig wirkt. Heute wird aber das genaue Gegenteil gefordert. Kümmere dich selbst! Sieh dich um! Entfalte deine Möglichkeiten! Lerne zu wählen! Finde heraus, was für dich gut oder schlecht ist! Nicht nur, daß wir darin keine Übung haben, es war uns ja geradezu verboten, dies zu tun. Das schafft zunächst eine

große Verunsicherung. Der Prozeß der Vergewisserung braucht daher Zeit und Begleitung. Wir brauchen Verständnis dafür, daß man sich aus einem Verbot heraus entwickeln muß. Natürlich macht dieser Prozeß Angst, zumal diese Verbote schon in der frühesten Kindheit eingeübt wurden. Man muß also das Neue lernen, bevor man sich sicher fühlen kann und Zufriedenheit erlangt. Nicht nur, daß wir die Zeit für den Lernprozeß nicht haben oder uns nicht nehmen oder bekommen, nein, das Neue wird uns geradezu aufgenötigt. Das aber bedeutet: Hier fehlt der innere Freiraum für eine Entwicklung. Das Neue wird wieder zur Nötigung, und das schafft diese besondere psychische Belastung, in der wir leben.

Frage: Ihnen geht es demnach nicht um die bloße Aneignung neuer Sachinhalte, sondern um ein Zu-sich-Kommen, das sich unter den neuen Bedingungen gestalten will?

Maaz: Das sind tatsächlich zwei Dinge. Man darf die Sachebene nicht vernachlässigen, aber die innerseelische Problematik braucht dringend Beachtung. Hier liegt ein deutliches Problem: Wir müssen auf der Sachebene viel dazulernen, doch von uns will niemand etwas lernen. Das ist eine neue Kränkung. Alles, was wir gelernt haben, was wir wissen, was zu unserer Lebenserfahrung gehört, taugt nichts mehr. Es wird uns nicht abverlangt. Das hat natürlich etwas mit den politischen Hintergründen der Vereinigung zu tun. Uns wird gesagt: Ihr habt unsere Erfahrung zu übernehmen! Ich denke, eine alte Nötigung darf nicht durch eine neue ersetzt werden. Das bringt Widerstand, Abwehrhaltung, Nörgeln und Pessimistisch-Sein hervor. Dabei ginge es doch darum, daß sich innerlich etwas verändern könnte, daß wir uns endlich aus der erfahrenen Einengung, aus der erlittenen Demütigung herausarbeiten im Sinne einer heilenden Erfahrung. Dafür brauchen wir Raum, um neue Erfahrungen aus uns selbst heraus wagen zu können. Wir können Eure Erfahrungen nicht einfach übernehmen, denn diese Einstellungen und Haltungen sind über 40 Jahre im Westen gereift, nicht bei uns. Selbst wenn alles Westliche gut wäre – was ja so nicht stimmt –, selbst dann wäre es für uns nicht gut, weil wir aus einer anderen Sozialisation stammen. Wir kommen aus einem anderen Erfahrungshintergrund. Wir müssen die Veränderung selbst machen. Wir brauchen einen persönlichen Umgang mit den Dingen. Das ist ein Lernprozeß. Nun kommt hinzu, daß nicht alles, was an westlicher Lebensart auf uns zukommt, gut wäre, es existieren ja in der Marktwirtschaft auch viele Probleme. Weil wir von außen kommen, können wir die Probleme deutlicher sehen, dadurch gibt es auch eine ganz verständliche Abwehrhaltung. Bis jetzt ist für mich noch nicht erkennbar, daß diese Probleme ernsthaft diskutiert würden. Es wird zwar so getan. Man sagt uns: Ihr habt jetzt bessere politische Verhältnisse, Ihr bekommt jetzt viel Geld, also seid doch froh und glücklich! Doch das funktioniert so nicht. Diese Haltung geht an den seelischen Bedürfnissen vorbei.

Frage: Gibt es angesichts solch tiefgreifender Unterschiede in den Lebenswelten und Biographien überhaupt die Möglichkeit der Verständigung?

Maaz: Es wurde ja hinreichend deutlich, daß politische und ökonomische Veränderungen nicht genügen. Das Problem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ird dadurch nicht gelöst. Es muß auch eine psychologische Veränderung geben. Wenn allerdings die Aufforderung zur Veränderung nur an eine Hälfte des Volkes gerichtet bleibt, schafft dies neue Ungerechtigkeiten. Es entsteht eine Zwei-Klassen-Gesellschaft mit neuer Kränkung und Demütigung. Das schafft verständliche Abwehr und Protesthaltungen. Für ein wirkliches Zusammenwachsen ist aber Veränderung auf beiden Seiten nötig. Auch der Westen kann sich von uns sagen lassen, was uns an seiner Lebensweise nicht gefällt, worin wir uns Veränderungen und Entwicklungen wünschen. Diese Gleichheit der Wünsche und Bedürfnisse, aber auch die Ungleichheit der Bedürfnisse muß akzeptiert werden. Wir sollten diese unterschiedlichen Bedürfnisse als verschieden wahrnehmen, aber gleichwertig behandeln. Wenn es also zu Begegnungen in Gemeinden oder Seminaren kommt, die das Zusammenwachsen fördern sollen, dann ist auf beiden Seiten die persönliche Mitteilung vonnöten. Wie lebte ich im Osten? Wie lebe ich jetzt hier? Was fürchte ich, und was wünsche ich mir? Was sind meine Möglichkeiten und was meine Behinderungen? Das gleiche gilt für die Teilnehmer aus dem Westen. Welche Möglichkeiten und Behinderungen erleben sie? Auf diese Weise ist eine wirkliche Begegnung zwischen den Menschen möglich. Dann erst geht es nicht nur um äußere Dinge. Die Erwachsenen fragen: Welches Auto fährst du? Welche Reisen hast du gemacht? Dadurch wird der Wert bestimmt. Wird aber darüber gesprochen, wie ich mich seelisch befinde, wie ich in meiner Familie lebe, wie ich mit meiner Partnerschaft umgehe und mit meinen Freunden und Kindern, dann kommt es zu echter Begegnung. Wenn wir uns in den zentralen menschlichen Bedürfnissen begegnen, dann ist ein Zusammenwachsen möglich, und das möchte ich gern einklagen.

Frage: Bildungsarbeit soll demnach nicht nur einen Ort der Begegnung bieten, sondern die Begegnung selbst in das Zentrum ihres Anliegens stellen, das aber setzt die Fähigkeit und den Mut zur persönlichen Meinungsäußerung voraus.

Maaz: Sehen Sie, ein Leben lang haben wir erfahren, daß man bewertet wird in allem, was man sagte. Wenn man abwich von der Meinung der Mächtigen, dann bekam man zu hören und zu fühlen: Du bist nicht in Ordnung, du bist falsch, du bist ein Feind! Nicht nur Beschämung, sondern auch Bedrohung war die Folge, und deshalb gibt es eine tiefsitzende Scheu. Man kann diese Scheu nicht per Akklamation beseitigen, es muß eine Atmosphäre geben, in der man den Mut gewinnt, sich selbst zu wagen, sich selbst zu zeigen und die Erfahrung zu machen, daß man nicht bestraft oder beschämt wird. Wenn dies mehrfach möglich ist, wächst aus dieser Erfahrung ein neues Selbstvertrauen. Das Vertrauen ist für die Sinnfindung ein wesentliches Element. Wird Sinn verordnet, oder ist eine Sinnerfahrung möglich? Man kann auch sagen: Wird Sinn von außen gegeben, oder hat Sinn etwas mit einem inneren Zustand zu tun? In der ehemaligen DDR wurde äußerer Sinn vorgegeben, Sinn wurde verordnet. Diese Gefahr besteht jetzt allerdings wieder, daß Sinn von außen verordnet wird oder

daß die Menschen in der alten Haltung verharren, sich Sinn geben lassen zu wollen. Deshalb haben die Sekten auch bei uns Erfolg. Die Menschen wollen sich Sinn geben lassen, weil sie es so gewohnt sind. Die Umstellung, aus sich selbst heraus Sinn zu finden und Sinn zu erfahren, ist ein längerer und anstrengender Prozeß. Nun kommt erschwerend hinzu, daß in der ehemaligen DDR Sinnerfahrung nicht mit Liebe, Annahme, Zuwendung begleitet, sondern grundsätzlich behindert wurde. Das löste nicht nur Angst, sondern auch Empörung, Wut, Zorn und Protest über die erlebte Einengung aus. Dieser Zorn konnte wiederum nirgendwo gelebt werden. Hätte er sich ausgedrückt, so wäre man abermals beschämt worden, d.h., es ist viel berechnete Aggressivität in den Menschen angehäuft. Der totale Sicherheitsstaat hielt dieses Aggressionspotential ständig unter Kontrolle. Nun fehlt der Deckel des Sicherheitsstaates, die Labilisierung und die reale Existenzbedrohung durch Arbeitslosigkeit und Lehrstellenmangel kommen zusammen. Da kann unter bestimmten Umständen aus dem berechtigten Aggressionspotential ein überschießendes, destruktives Gewaltpotential entstehen. Ich muß allerdings sagen, daß ich Menschen kennengelernt habe, die in der Gewaltszene tätig sind. Das sind junge Menschen, die Gewalt selbst erlitten haben. Das muß nicht physische Gewalt, das kann auch psychischer Terror gewesen sein. Das bedeutet, es handelt sich um Menschen, die selbst Opfer von Gewalt wurden und nun unter innerem Druck selbst dazu fähig sind, Gewalt auszuüben. Wenn man es auch versteht, so muß man es nicht entschuldigen. Ich möchte nur sagen, daß die Gewaltszene ein Symptom der sozialen Verhältnisse ist. Ich möchte auch verhindern, daß einzelne wenige zu Bösewichten abgestempelt werden, weil sie ein Symptom austragen, das weitverbreitet in unserer Gesellschaft vorhanden ist. Bildungsarbeit sollte die Zusammenhänge beachten und Wege der konstruktiven Bearbeitung suchen und begleiten.

Frage: Kirche hat ja in der ehemaligen DDR einen lebendigen Raum geboten, in dem sich Widerständiges formulieren und Orientierung erprobt werden konnte. Wie sehen Sie heute die Aufgaben kirchlicher Jugendarbeit?

Maaz: Kirche könnte weiterhin ein Ort sein, der Begegnungen ermöglicht, sie sollte Raum und Zeit geben und eine vertrauliche Atmosphäre schaffen, in der etwas wachsen kann. Persönliche Begegnungen, emotionale Mitteilungen, die nicht gleich Beschämung oder Bestrafung ausgesetzt sind. Aber hier liegt auch eine Gefahr. Es gibt in der Kirche diesen Raum, in dem nicht gleich moralisch diffamiert wird, es gibt diese Offenheit, aber es existiert auch der Bereich der Moralisation, in dem der Zeigefinger erhoben wird. Kirche müßte sich als tolerante Institution erweisen, nicht als eine moralisierende. Ich denke, das ist eine zentrale Aufgabe der Kirche, denn wenn es um menschliche Nähe geht, um Solidarität, soziale Gerechtigkeit, Liebe im umfassendsten Sinne, also wesentliche Werte, dann ist Kirche die Institution, die diese Werte pflegen und wachsen helfen kann. Darin sehe ich eine Chance. Was mich aber wirklich beunruhigt, daß der Vereinigungsprozeß vornehmlich als wirtschaftlicher Prozeß verstanden wird. Wenn man nur etwas weiter denkt, muß man

sich fragen: Wenn nun das Wirtschaftswunder Ost gelänge, dann bekämen wir ja Anschluß an eine expansive Wohlstands- und Wirtschaftspolitik und Ideologie, wie sie im Westen herrscht. Mit diesem Wachstums- und Wohlstandsverhalten ist ja eine zunehmende ökologische Belastung dieser Welt und die zunehmende soziale Ungerechtigkeit zwischen Nord und Süd verbunden. Ich habe die schreckliche Vision, wenn es gelingt, wie das Modell Deutschland zur Zeit wirtschaftlich und politisch gedacht ist, dann brauchen wir im Osten wie im Süden eine riesige Mauer, um uns vor den Völkerwanderungen zu schützen, die dann auf uns zukommen mit dem gleichen Recht, so leben zu wollen wie wir auch. Das ist für mich ein solch ernster Gedanke, daß ich von daher diese moralische Pflicht ableite: Wir müssen uns Gedanken machen über eine neue Gesellschaftskonzeption, über neue Werte! Statt größeren Wohlstand und Wirtschaftswachstum gibt es für mich die entscheidende Alternative der Humanisierung der Beziehungen. Das bleibt für mich ein Gegensatz. Das eine ist mit dem anderen nicht zu haben. Je mehr Konkurrenz und Leistungsgesellschaft, desto mehr werden die Beziehungen gestört. Diese Diskussion muß, denke ich, dringend geführt werden, auch wegen der globalen Bedrohung. Gerade durch die Vereinigung gerät dieser Konflikt stärker ins Blickfeld. Wir fordern den Anschluß an das Wirtschaftsimperium; mit welchem Recht will man die anderen Völker ausschließen? Und daß alle in solch einem Überfluß leben können, wie wir es tun und nun auch wollen, das ist ein Unding. Das macht diese Welt kaputt.

M.v.F.: Ein nachdenkliches Wort, das über das deutsch-deutsche Zusammenwachsen hinausgreift, das nationale Anliegen in seinen globalen Auswirkungen kritisch zu fassen sucht und somit die Frage nach einem Deutschland, das sich zu erneuern trachtet, grundsätzlich stellt.

Ich danke Ihnen für das Gespräch.

Halle, den 4.6.91



## **„Wenn mir jemand vor einem Jahr gesagt hätte, daß ich hier sitze, ich hätte es nicht geglaubt.“**

Wie war es in der DDR? Freunde fragen nach meinen Erfahrungen. Es ist noch etwas Besonder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unterrichten. „Anstrengend, interessant, viel Neues, ich habe dazugelernt.“ Ich vermeide es, ausführlicher zu antworten. Erzähle ich einige Erlebnisse, dann spüre ich, daß es mir mißlingt, für mich Entscheidendes zu vermitteln.

Der äußere Rahmen: Ich unterrichte Soziologie in einer Umschulungsmaßnahme des Arbeitsamtes in einem kleinen Ort in Sachsen-Anhalt; innerhalb von zwei Jahren werden „Sozialpädagogische Berater“ ausgebildet; die UmschülerInnen (etwa drei Viertel Frauen, ein Viertel Männer) kommen aus pädagogischen und pädagogiknahen, aber auch pädagogikfernen Berufsfeldern; Alter und Vorbildung sind breit gestreut; Krankenschwester, ehemaliger LPG-Bauer, Diplomlehrerin für Deutsch und Russisch, Kinderkrippenschwester, Führungskader der Gewerkschaft zwischen Mitte zwanzig und Anfang fünfzig lernen in einer Gruppe.

### **Bilder**

Nach fünf Tagen Intensivkurs habe ich den Eindruck, wochenlang von Hannover weggewesen zu sein. Das Gefühl von verdichteter Zeit ist mir von Bildungsurlauben mit Internatsarbeit vertraut, aber die Umstellung auf den eigenen Alltag fällt mir normalerweise leichter. Meine Ohren, Augen, Nase haben mich stark gefordert, und weder ein Kinobesuch oder ein heißes Bad noch ein Spaziergang reichen, um meinen Kopf freizubekommen.

Die Quarkspeise und der Salat am Freitagabend nach zehn Fleischmahlzeiten mit verkochtem Büchsen Gemüse schmecken frisch. Die durchaus akzeptable Hausmannskost in der Kantine machen mein Magen und mein Öko-Kopf nicht mehr umstandslos mit. Mit Blick auf die weißen Wände unserer Wohnung erhole ich mich von verwirrend geblühten Tapeten und anders geblühten Gardinen in einem viel zu engen Unterrichtsraum und den gemusterten Tischdecken in meinem Privatzimmerchen. Beim täglichen Yoga habe ich fünf Tage lang die Atemübungen gestrichen, weil es selbst im Haus rauchig nach verbrannter Braunkohle riecht. Der Spruch von Beck: „Not ist hierarchisch. Smog ist demokratisch“, paßt. Als Fotomotive reizen mich dagegen aufgeschüttete Briketthaufen vor der Haustür. Kohlen gibt es anscheinend genug – sie können unbewacht liegenbleiben –, anders als in meiner Kindheit, wo wir den Tagesbedarf Eierkohlen eimerweise holten, weil für mehr das Geld nicht reichte. Kopfsteinpflaster, Baumalleen, einfache Schaufensterauslagen, handbemalte Schil-

der, alte Holztüren und -fenster. Rumpflecken mit Ausrangiertem, notdürftig Geflicktes, Nicht-wieder-Aufgebautes animieren mich zu einem wehmütigen Blick auf für mich vergangene Zeiten. Gefühle von Erinnertwerden sind jedoch nicht unmittelbar an eigene Kindheitserlebnisse – ich bin eine Großstadtplanze und kenne das Hinterhofmilieu – gebunden. Spuren von Verlangsamung, Innehalten, Stillstand wirken wie ein Medium, selbst Rückschau zu halten. Ohne den Streß allerbunterster Eindrücke im gewohnten Normaltempo fällt es leichter. Gleichzeitig muß es direkte Anreize geben, diesen Bogen nach rückwärts zu spannen, denn ein beschaulicher Urlaubsort im Süden hat für mich keine vergleichbare Suggestivkraft. Gerüche? In Notzeiten haben wir mit Gummi von alten Autoreifen geheizt. Ein atemberaubender Gestank. Gesehenes? Die Kriegsschäden an meinem Wohnhaus, ein halb weggerissener dritter Stock sind über Jahre sichtbar geblieben. Gehörtes? Wohl die größere Stille und ein tuckernder alter Borgward auf dem Hinterhof. Villen aus der Jahrhundertwende außerhalb der mittelalterlichen Wallanlage von Gardelegen wecken Wünsche, dort wohnen zu können. Auch im Dorf Letzlingen entdeckte ich Häuser, die meine Träume anregen. Ich merke, daß mich bröckelnder Putz und eine kaputte Regenrinne von dem Perfektionsdruck eines durchgestylten und überbeuerten Wohnmilieus befreien. Spuren der Vernachlässigung oder Provisorisches wirken wohlthuend im Vergleich zu mißratenen Sanierungsprojekten mit Eternitfassaden oder Einfamilienhäusern aus dem Katalog. Es ist ein Protest gegen die Moderne, gegen ihre wechselnden Moden, gegen ihren Überfluß. Deprimierend dagegen einfallslose Neubauviertel („Schließfächer, Karnickelbuchten“), die den Bauschäden keinen Charme des Alten entgegensetzen können.

Ich fotografiere viel. Ich bin geübt, Details zu entdecken. Mit höchst gespannter Aufmerksamkeit gehe ich durch die Straßen. Für vieles reicht die Zeit nicht. Ich bin ärgerlich, wenn es dämmt. Außerdem läßt sich mein Teleobjektiv nicht richtig scharf stellen, und der Bildtransport klemmt. Mir fallen die soliden Practicaprodukte ein ... Ich habe das Gefühl, mich im Wettlauf mit der Zeit zu befinden. Ich befürchte, daß nichts bleibt, wie es war ... Ich empfinde Trauer und banne sie durchs Bild, aber immer mit dem Gefühl, die Atmosphäre doch nicht treffen zu können. Ich möchte etwas festhalten, was für mich schon seit Jahrzehnten vergangen zu sein scheint, und mir plötzlich wiederbegegnet. Der Supermarkt in Letzlingen hat noch DDR-Seltersflaschen, in einem Schreibwarenladen gibt es noch DDR-Geschenkpapier, im Blumenladen werden handgeflochtene Kartoffelkörbe preiswert verkauft. Ich kaufe ein, um Dinge auch materiell festhalten zu können. Mit fällt die Idee von Tretjakow ein, der in den zwanziger Jahren in der UdSSR Sozialbiographien zusammengestellt hat, indem er Leute bat, die Geschichte von Gegenständen zu erzählen, die sie in ihrer Tasche mit sich trugen. Was könnte die Seltersflasche mit ihrem unscheinbaren blauen Etikett erzählen, die jetzt zwischen bunten Granini-Säften steht? Fast körperliche Schmerzen löst der Ausverkauf von DDR-Buchbeständen zu Spottpreisen aus. Ulrich Plenzdorf: „Die Leiden des jungen W.“ – in den Siebzigern ein Kultbuch der protestierenden Jugend – wird in der 10. Auflage von 1990 für 2 Mark verramscht. Die

Lager müssen freigeräumt werden für Westware: 1000 Tips für Camper, Rezepte für den Mikrowellenherd, Bastei-Romanhefte, Fernsehzeitschriften in breiter Auswahl. Ich schäme mich, mit Stößen billiger Bücher und Mehrfachexemplaren den Laden zu verlassen. Der Verkäuferin tut es weh, daß Unverkäufliches in einigen Tagen zum Altpapier kommt. Greno wirbt als Besonderheit mit im Bleisatz gedruckten Büchern, hier gehen sie demnächst in Flammen auf. Im alten Theater, gerade erst renoviert, finden Gastspiele der Stendaler Bühne nur noch selten statt: keine Nachfrage. Statt dessen werden tagsüber Schuhe, Rheumadecken, Ringelblumensalbe, Plastikfenster, Keyboards – für jede Alters- und Einkommensgruppe etwas – verkauft. Das bringt immerhin noch ein paar Mark Miete ... Gekauft wird wenig oder gar nichts. Die Leute halten ihr Geld zusammen, da nutzt es auch nichts, wenn die Ringelblumensalbe „statt für 38, nicht für 30, nicht für 20, nein, für runde 10 Mark“ verkauft wird. Wer sich rasch etabliert hat, sind offensichtlich die Versicherungen. Immer wieder Hinweisschilder auf Vertretungen. In die schönsten Häuser in zentraler Lage sind inzwischen die großen Banken eingezogen. Wo noch nicht renoviert und restauriert ist, verkünden es zumindest Bauzäune: „Für unsere Kunden eröffnet hier demnächst in größeren Räumen ...“ Lebensmittelketten haben sich im Innenstadtbereich noch nicht angesiedelt. Statt mit Aldi, Penny oder Plus haben wir es an der Fassade noch immer mit den „Waren für den alltäglichen Bedarf“ zu tun. Wie ein höhnischer Kommentar wirkt eine alte Hausinschrift aus vorsozialistischen Tagen: „Willst Du bauen Straßen, Gassen, muß Du die Leute reden lassen“. „Das haben wir nicht gewollt“ – ein mehrfach gehörter Satz.

„Wenn mir jemand vor einem Jahr gesagt hätte, daß ich hier sitze, ich hätte es nicht geglaubt.“ So eine Teilnehmerin der Umschulungsmaßnahme. Mir geht es ähnlich – allerdings mit dem wesentlichen Unterschied, daß ich freiwillig komme und nach einer Woche wieder abreise. Ich bin neugierig auf ein mir fremdes Land und erhoffe mir Einblicke, die mir meine Kurzreisen nach Wismar, Schwerin, Neuruppin, Quedlinburg, Leipzig, Ost-Berlin nicht vermitteln konnten. Ich spüre noch die Aufregung, die Humboldt-Universität zu betreten, oder die Rührung, mit der Fähre über Elbe und Havel ans andere Ufer zu treiben, aber auch den Schrecken, daß der Stechlinsee einen Teil des äußeren Wasserkreislaufes des Atomkraftwerks Rheinsberg bildet. Aus Schloß Rheinsberg, mir aus der Liebesgeschichte von Kurt Tucholsky in Erinnerung, ist ein Krankenhaus geworden.

Die Frage nach dem, was wird, hat mich jetzt jedoch in anderer Weise gepackt. Sie geht tiefer und macht mich hilflos.

Ich bin auf die Seminarwoche gut vorbereitet. Ich habe zusätzliche Materialien mit, wenn der Reader nicht ankommt, habe ich ein Konzept beweglicher Arbeitsformen parat, bin auf Konflikte und Krisen seelisch eingestellt. Unbehaglich bleibt mir unsere Vorentscheidung, fast ausschließlich mit Texten zur westdeutschen Wirklichkeit zu arbeiten. Unsicher bin ich, welche Anteile meiner kreativen Arbeitsweise ich produktiv einbringen kann.

## Das Eis ist dünn

2 1/2 Tage habe ich den Eindruck, daß der Kurs gut läuft. Es wird engagiert diskutiert, kompetent vorgetragen, die Mehrzahl beteiligt sich, wir lachen und scherzen. Kleinere Klippen scheinen mir umschiffbar: Der Einstiegsfragebogen wird als Ausfragerei aufgefaßt, ein Familienrollenspiel wird mit Kindergarten assoziiert, meine Lockerungsübungen laufen unter „hohles Rumgehops“. Die schriftlichen Feed-back-Runden am Ende des Tages bestätigen meine Eindrücke. Dennoch bleibt ein Unbehagen. Ich habe das Gefühl, mich auf dünnem Eis zu bewegen. Ich bin mir meiner eigenen Rolle nicht sicher. Bezahlt nach Westtarif und ohne genauere Einblicke in die DDR-Gesellschaft, bin ich aus Neugier und Interesse hier, aber was weiß ich zu sagen, ohne anmaßend zu sein? Ist nicht schon mein bloßes Hier-Sein ein Element von Kolonisierung, was ich in anderen Zusammenhängen politisch kritisiere? Als Pädagogin habe ich einige Anhaltspunkte für brüchiges Eis:

- negative Eindrücke, die sich faktisch auf Randereignisse im Kursverlauf beziehen, werden wiederholt kritisiert;
- rege Diskussionen und befriedigende Gruppenarbeit scheinen nicht die Gesamtzufriedenheit zu verbessern;
- mitunter werden inhaltliche Positionen überraschend starr und unflexibel vertreten;
- unachtsame Äußerungen von mir wirken unerwartet persönlich und verletzend.

Vor allem ein unüberlegter Eingriff in die Arbeitsformen der Teilnehmenden („wenn ihr einen Text gleich unterstreicht, könnt ihr nicht zwischen Wichtigem und Unwichtigem unterscheiden, habt ihr bei den ‚Arbeitstechniken‘ nicht darüber geredet?!“) belastet das Gruppenklima. Ein Satz aus dem schriftlichen Feed-back erschreckt und warnt mich: „Ich schlage vor, den von Erfahrung getragenen Arbeitsstil zu belassen – Osis können nämlich auch etwas“. Wird hier überschüssiger Widerstand signalisiert, so gibt es ein Gegenbild: „Ich muß erst einmal hinnehmen, daß das, was mir vermittelt wird, gut ist, weil alles, was mir bisher vermittelt wurde, nicht so gut war.“

Es geht um weit mehr als um das Kursgeschehen. Nicht nur die Lebensverhältnisse, sondern bisher gesellschaftlich gültige Normen und Sichtweisen werden infrage gestellt. Das Tempo gewollter, aber auch erzwungener Umorientierung ist individuell kaum noch steuerbar. Hier sind nicht nur Lehrstoff und methodisch-didaktische Kompetenzen gefragt. Ich werde wütend, weil sich hier Scherben, für die die Anschlußpolitik seit der Maueröffnung verantwortlich zeichnet, anhäufen. Ausgebildet werden diejenigen, die zukünftig zu kitten und zu reparieren versuchen. Dieser politische Ärger kommt mir jedoch in die Quere, wenn ich im Kurs agiere. Ich kann mich nicht umstandslos mit dem Unmut und den Enttäuschungen der TeilnehmerInnen solidarisieren, sondern muß zu ihren Problemen Distanz halten, um den Kurs nicht zum Ersatzkrisenherd werden zu lassen. An einigen Stellen in den Plenumsgesprächen wird deutlich, daß versucht wird, bisherige Positionen zu halten. In der DDR

hat es keine Prostitution oder Drogenprobleme gegeben, die Frau ist gleichberechtigt gewesen, der Alltag ist kinderfreundlicher gestaltet. Einwände gibt es, aber sie bleiben vereinzelt oder sind zaghaft und zögernd.

In schriftlichen Äußerungen zum Thema „Familie“ werden widersprüchliche Einschätzungen deutlicher. Es wird angesprochen, daß die Berufstätigkeit der Frau nicht selbstverständlich zur Gleichberechtigung in der Familie verholfen hat:

„Frauen aus der ehemaligen DDR haben fast alle täglich 8 bis 8 3/4 Stunden gearbeitet. Anschließend die Kinder von der Krippe oder dem Kindergarten abgeholt. Einkaufen gegangen, Haushalt erledigt. Sie hatte, wenn der Mann nicht geholfen hat, so meine Erfahrung, einen Stundentag von mindestens 14 Stunden. Durch diese Doppelrolle, die die Frau in der Familie spielt (Beruf, Haushalt, Erziehung) fühlt sie sich überfordert. Sie hat wenig Zeit für sich, die sie bestimmt auch gern hätte.“

Anders akzentuiert es eine andere Teilnehmerin:

- „– fühle mich nicht überfordert, da großes Entgegenkommen und Verständnis von meinem Lebenspartner;
- gute und von beiden Seiten aus gerechte Aufteilung der Verantwortung und Arbeit;
  - übernehme und mache gern meinen Teil (Wäsche, Erziehung, Sauberkeit);
  - Rolle der Frau in der BRD eher mütterlich und klassisch;
  - Rolle der Frau bei uns eher gleichberechtigt (wenn sie es will und durchsetzen kann).“

Sachlich absurde Blüten treibt der eigene Verunsicherungsprozeß vereinzelt in der krassen Gegenüberstellung von westdeutschen und ostdeutschen Frauen.

„Ex-DDR

- Frau berufstätig;
- Frau ökonomisch vom Mann unabhängig;
- Aufgabenverteilung war notwendig;
- es gab Gleichberechtigung im Haushalt und bei der Arbeit;
- durch Berufstätigkeit kaum Zeit und Freizeit;
- Kindererziehung beide 50 %.

BRD

- Frau ist ausschließlich im Haushalt tätig;
- Frau ist vom Mann abhängig;
- Frau muß familiäre Belastungen fast allein tragen;
- Frau möchte auch unabhängig sein;
- eintönig, trist, man will raus aus dem Trott;
- Kinder werden zu 80 % von der Frau betreut.“

Es kommt auch zu Abgrenzungen, sich überhaupt mit BRD-Verhältnissen befassen zu wollen. Die Frage nach Merkmalen westdeutschen Familienlebens wird mit einem Minuszeichen versehen, oder es fallen Äußerungen wie: „Drüben in der anderen Gesellschaft“ oder: „Es ist nicht meine Welt“.

## Das Eis wird brüchig

Am Mittwochmorgen werden kommentarlos die Umschulungsverträge des Arbeitsamtes, die bis zum Mittag unterschrieben abgegeben werden sollen, hineingereicht. Fragwürdige Einzelpunkte und das Dilemma der ungeklärten Zertifikatsfrage lösen wütendes Hin- und Hergerede aus. Mich ärgert das Vorgehen, daß weder Zeit zur ruhigen Lektüre noch Gelegenheit zu Nachfragen und gemeinsamem Gespräch bestehen. Ich mache den Vorschlag, die Unterschriftenfrage auf den nächsten Morgen zu vertagen und nach dem Mittagessen strittige Punkte zu diskutieren. Ich befürchte auch, daß eine sofortige Diskussion die Planung des Tages sprengt. Mein Vorschlag wird akzeptiert. Es stehen inhaltlich freigewählte Kurzreferate zum Thema „Arbeit“ auf dem Programm. In Partnerarbeit werden die Notizen vom Vortag noch einmal durchgegangen. Die Runde beginnt mit einem abgelesenen Text zur gesellschaftlichen Funktion von Arbeit. Es folgen Ausführungen zur Rationalisierung in der Wertindustrie. Dann werden die Begriffe Erwerbsarbeit, Hausarbeit, Eigenarbeit vorgestellt. Eine Teilnehmerin vergleicht das kapitalistische und sozialistische System der Arbeit für die Betroffenen. „Für uns war das Recht auf Arbeit gesetzlich verankert. Jeder hatte einen sicheren Arbeitsplatz und ein gesichertes Einkommen. Wir haben ein behütetes Leben geführt. Gleichzeitig sind wir auf eine Linie festgelegt worden. Kreativ waren wir höchstens, wenn wir trotz fehlender Arbeitsmittel doch noch etwas zustandebrachten. Initiativen und Ideen wurden abgewürgt. Ich habe es selbst bitter erfahren. Herzpatienten in der Klinik wurden lieber in der Kneipe herumhängen gelassen, anstatt ihnen ein sinnvolles Programm anzubieten. Die BRD beschert uns einen Sprung ins kalte Wasser. Marktwirtschaft scheint Arbeitslosigkeit zu heißen. Schlimm muß es für die jungen Leute ohne Lehrvertrag sein. Es fehlt an Geld, aber schrecklicher ist das Gefühl, sich abzukapseln, nicht raus zu können, keine Perspektiven zu sehen, sich überflüssig zu fühlen. Der Sinn des Lebens ist infrage gestellt. Wozu lebe ich? Ich habe versucht, mir vorzustellen, wie lange ein Mensch bewegungslos auf dem Sofa liegen kann. Das geht doch gar nicht ...“ Die Teilnehmerin – im Kurs eine stille, ruhige Frau – ist bewegt und aufgebracht. Das auf den Nachmittag vertagte Thema „Umschulungsvertrag“ verschafft sich seinen Platz auf andere Weise. Die Gruppe wirkt wach, konzentriert, betroffen. Kurzes Schweigen. Ich sehe zurückgehaltene Tränen. Einfach fortfahren? Ich schlage vor, daß reihum mitgeteilt wird, was am eben Gehörten persönlich wichtig war. Wenige greifen Sachaspekte auf: Führt die Marktwirtschaft zu Arbeitslosigkeit? Woran ist die DDR gescheitert? Welche Funktionen erfüllt Arbeit? Angespannt zugehört wird aber denjenigen, die ihre eigene Betroffenheit ausdrücken. Teilaussagen der Referentin werden hervorgehoben, um eigene Nöte und Ängste indirekt zu thematisieren. Im Zitieren der anderen wird ein Weg, sich selbst mitzuteilen, gefunden. Mit jeder Äußerung wird die Runde persönlicher. „Leben und Arbeit hängen zusammen“, „plötzlich bin ich nicht mehr gefragt“, „erst jetzt schätze ich meine frühere Arbeit“, „der Kahn geht unter – es kommt nicht wieder, was mal war“, „wir arbeiten nicht schlechter als andere – wir sind nicht dümmer“, „mein Selbstbewußtsein leidet“, „mein Fell wird

dünn“, „was wird aus uns Frauen in der neuen Gesellschaft?!“, „ich habe schon 119 abgelehnte Bewerbungen“, „die Erfahrung tut weh, wenn ich wenigstens ein Licht am Tunnelende sähe ...“. Alle äußern sich.

Es folgen weitere Kurzvorträge: Statistiken zur DDR-Wirtschaft, Arbeitslosigkeit von Jugendlichen, Risikoträger auf dem Arbeitsmarkt. Formulierte Kritikpunkte werden schärfer: „Wir sind ausgebildet, jung, haben Berufserfahrung und trotzdem ...“, „wir sind total angeschmiert“, „da gehste weg zum Türkentarif“, „Frauen mit Berufswunsch scheinen abnorm zu sein“, „das ist ja ein Witz, wenn ich mich in der Statistik als Hausfrau vorstelle“. Ärger, Wut, Enttäuschungen, Kränkungen ... Dennoch werden die Berichte diszipliniert vorgetragen. Ich halte die spürbaren Spannungen kaum noch aus. Ich merke, daß ich schon nicht mehr richtig durchatme. Mittagspause.

Die Umschulungsmaßnahme wird zum Thema. Ich höre zu. Die Beiträge sind ausführlich. Die Stimmung ist explosiv.

„Ich komme mir vor wie eine Comicfigur mit Sprechblasen. Mir wird etwas zugeschnitten, und daraus soll ich mir ein Berufsbild zimmern. Was hängt am Sozialarbeiter? Was sind die grundlegenden Kenntnisse? Statt dessen werden Werke subjektiv ausgewählt, nur Meinungsbildung. Von drei Seiten wird auf uns geschossen. Was mache ich hier überhaupt? Wie im luftleeren Raum ...“

„Wir sind die vierte Woche hier. Ich hätte auch zu Hause bleiben können. Wir haben nur rumgeblödet und nichts gelernt. Was wird im Beruf verlangt? Was sind Grundlagen? Wir sind keine dummen Jungs oder blöde Osis. Wir haben alle eine abgeschlossene Ausbildung. Der Marxismus-Leninismus war hohl, aber in der BRD scheint noch mehr hohler Schwachsinn zu sein. Oder ist das Rumgeeiere an den Unis normal? Dafür habe ich überhaupt keine Antenne. Liegt es an euch oder an uns? Manchmal denk ich, daß nur wieder Leute aus der BRD für zwei Jahre einen Arbeitsplatz haben, und alles andere ist egal. Das war doch bisher kein Unterricht.“

„Ich kann mich immer schwerer motivieren. Nur der Gruppenzusammenhalt treibt mich her. Man kommt nicht zur Sache. Ich finde es enttäuschend, erniedrigend. Was steht unter dem Strich? Da steht nichts, absolut nichts, im großen und ganzen nichts.“

„Wir unterhalten uns ständig. Das geht jeden Tag von Neuem los. Was ist mit dem Abschluß? Was haben wir in der Hand? Ich kann mich zu Hause nicht mehr rechtfertigen. Was erzähle ich, was wir hier machen? Man kommt sich vor wie weiße Mäuse, die getestet werden, um zu sehen, was passiert.“

„In dem Zertifikat ‚sozialpädagogischer Berater‘ sehe ich keinen Sinn. Wir haben wieder nichts in der Hand. Nach vier Jahren kommen die Fachhochschulabsolventen. Stückweise sind Zusagen zurückgenommen worden. Wir werden für dumm verkauft, das ist Dummenfang. Für das Arbeitsamt sind wir für zwei Jahre aus der Statistik.“

„Ich bin freiwillig hier und will lernen. Ich bin neugierig nach Wissen. Ich bin nicht ausgelastet. Jeden Tag wird es weniger. Ich nehme nichts mit. Die Tage verpuffen. Ich sehe mich noch nicht bis zum Schluß hier sitzen.“

Kritik an den vagen Berufszielen der Umschulungsmaßnahme, Furcht vor Konkurrenz auf dem Arbeitsmarkt, Kritik am nicht greifbaren Lernstoff und den offenen Vermittlungsformen, Legitimationsdruck gegenüber dem persönlichen Umfeld, eigene Verunsicherung und Selbstzweifel, enttäuschte Erwartungen auf Veränderung und neue Ziele, Entwertung vorhandener Kompetenz, Leerlauf von Wißbegierde und Interesse ...

Was davon geht auf meine eigenes Konto? Ich habe Mühe, gegenüber dem geballten Problemdruck Distanz zu bewahren. Das Bemühen um einen kommunikativen, selbständigen, erarbeitenden Unterrichtsstil kommt mir mit jedem kritischen Beitrag absurder vor. Ich argumentiere mit mir selbst, warum und wozu mein Vorgehen berechtigt ist. Die Bilanz des inneren Monologs sieht mager aus. Gedanklich stelle ich schon den Plan für die nächsten zwei Tage um: lehrgangsartige Wissensvermittlung ist gefordert. Dann rettet mich der Satz eines Teilnehmers aus der eigenen Skepsis: „Wir DDRler können uns nicht immer Asche aufs Haupt streuen“. Was habe ich von dem Gehörten verstanden? Was ist mit dem Gesagten gemeint? Für welche Fehler bin ich verantwortlich? Wo läßt sich etwas ändern? Was können erste Schritte sein?

### **Ein Tunnel ohne Ende?**

Unterrichtsschluß. Ich bin geladen, wütend über die Verhältnisse, wütend über die eigene Ohnmacht. Ich fühle mich verantwortlich, „den Karren aus dem Dreck zu ziehen“. In meinem Kopf kreist ein wildes Durcheinander. Ich muß raus. Ich muß laufen. Auf dem Spaziergang dann wieder ‚DDR pur‘. Am Ortsrand ein Riesenkomplex mit leerstehenden Neubauten. „Ja, können Sie kaufen oder mieten, hat heute in der ‚Volksstimme‘ gestanden. 20.000 m<sup>2</sup> Gelände, war für die Karnickelgroßschlachtung gedacht. Wer schlachtet denn heute noch? Das Kilo bringt 3.– DM, früher waren es 12.50 DM. Im kleinen Schlachthaus arbeiten sie auch schon auf Nullstunden kurz. Sagen Sie mir doch einen Betrieb in der Gegend, der noch arbeitet? Das Sägewerk ist dicht, die LPG kaputt, nichts in der Forstwirtschaft ... Naja, die sind doch alle hier zu Hause. ... solange das Geld halbwegs stimmt ...“ Dann vom Nachbarhaus eine stickige, stinkende Rauchwolke. Es wird eingeheizt.

Was mache ich am Donnerstag und Freitag? Ich ziehe mich auf die Anforderungen des Kurses zurück, wenn ich die Fülle von Eindrücken für mich nicht mehr verarbeiten kann. Ich denke nur noch in dieser Mikrowelt, um mich abzuschotten. Die Berichte zum Golf-Krieg verfolge ich nur in den Fünf-Minuten-Nachrichten am Vormittag und am Abend. Das Thema „Soziale Ungleichheit“ ist noch nicht bearbeitet. Soziale Ungleichheit life? Ich bin unschlüssig, ob die Leitung der Umschulungsmaßnahme es



nicht für unangemessen hält, wenn ich mich fürs Krisenmanagement zuständig fühle. Mein Ehrgeiz, einen Kurs befriedigend abschließen zu wollen, gibt den Ausschlag. Ich will das miese Gefühl loswerden, daß – im Bild einer Teilnehmerin – im Tunnel noch kein Licht zu sehen ist, obwohl wir schon eine gute Strecke Wegs hinter uns haben.

Meine Einschätzungen:

- generalisierte Schwarzseherei und Untergangsstimmung blockieren vorhandene Handlungsspielräume,
- kritische Rundumschläge verstellen den Blick für gemeinsam erlebte positive Ansätze,
- Veränderbares (Stoffvermittlung und Arbeitsweisen in der Maßnahme) droht durch Unabänderliches (unsichere Berufsperspektive) aus dem Blick zu geraten,
- Ängste und Verunsicherungen der Teilnehmenden beschränken den Spielraum für zumutbare Lernexperimente,
- Gelerntes muß über eine permanente Selbstvergewisserung erkannt und gesichert werden,
- vorhandene Kompetenzen (Lebens- und Berufserfahrung) müssen sichtbar gemacht und abgerufen werden.

Was kann ich aufgreifen? Ich bin noch zwei Tage im Kurs und plane, als wenn ich die Gruppe dauerhaft begleiten würde. In der Vorstellung ist es ‚meine Gruppe‘. Sind es Größenphantasien, daß ich es gegen die Trends des Arbeitsmarktes schaffen würde, den Teilnehmenden einen eigenen Sinn in der Maßnahme zu vermitteln? Ist es der Reiz, einen Knoten zu lösen, ein Knäuel zu entwirren? Ich schlafe schlecht. Ich bin mit meinen Ideen für die nächsten Tage noch nicht zufrieden. Wo ist der Wurm? Erst die morgendliche Dusche bringt mich auf Neues ...

## Lichtblicke

Eine lernintensive Phase beginnt:

Erste Runde:

Austausch und Reflexion. Mit welchen Arbeitsformen haben wir gearbeitet, mit welchen Lernerfahrungen sind sie verbunden, welchen Stellenwert besitzen sie für sozialpädagogische Arbeitsfelder? Ich stelle meine methodisch-didaktischen Entscheidungen zur Diskussion, und punktuell gelingt es mir, Sinn und Zweck nachvollziehbar und faßbar werden zu lassen. Verbindungslinien zu erforderlichen beruflichen Kompetenzen werden entdeckt. Durch Reihum-Äußerungen wird nicht einfach Arbeitszeit vertan, sondern Ideen vervielfältigen sich, Stille kommen zu Wort, Meinungsführer beschränken sich, Strömungen und Tendenzen werden deutlicher. Feed-back-Runden können dienlich sein, um Planungshinweise zu erhalten, Hierarchien zu verändern, das Lernklima zu verfolgen.

Es geht weiter:

Ich halte einen längeren Vortrag über sozialpädagogische Arbeitsfelder, Qualifikationserfordernisse und Arbeitsmarktbedingungen. Ich greife den Wunsch nach zusammenhängendem Referieren auf und erleichtere das Mitschreiben durch Gliederungshilfen auf Overheadfolien. Inhaltlich ist mir zweierlei wichtig. Ich möchte vermitteln, daß der wiederholt geäußerte Wunsch, einen fest umrissenen Wissenskanon zu erwerben, sich kaum erfüllen läßt, weil das sozialpädagogische Arbeitsfeld zu verschiedenartig und vielfältig ist. Selbst die Frage nach einem verbindenden Grundlagenwissen für unterschiedliche Zielgruppen, Tätigkeitsbereiche, Träger, Maßnahmen ist nicht eindeutig zu beantworten. Weder Unfähigkeit noch Unwilligkeit noch Verweigerung führen zu einer Zielverschiebung in Richtung Erwerb von extrafunktionalen Qualifikationen, sondern breite berufliche Einsatzmöglichkeiten erfordern sie. Darüber hinaus versuche ich die Prozesse der Platzierung auf dem pädagogischen Arbeitsmarkt plastisch und genau zu beschreiben. Mir geht es darum, dem Loch „Arbeitslosigkeit“ seinen generalisierten Schrecken zu nehmen, indem ich zwischen Formen und Dauer der Arbeitslosigkeit sowie Möglichkeiten schrittweiser Sickerprozesse in den primären Arbeitsmarkt genauer unterscheide. Auch führt die Erfahrung von Arbeitslosigkeit für die Betroffenen nicht einfach in einen Tunnel ohne Ende. Ich beschönige nicht, sondern zerlege Teilprobleme, um genauer hinsehen zu können und sie schrittweise handhabbarer zu machen. Gespanntes Zuhören und interessierte Rückfragen der Teilnehmenden vermitteln mir den Eindruck, daß mir mein Vorhaben gelingt.

Das schriftliche Feed-back – diesmal bezieht es sich auf zwei Tage, den ‚Krisen- und den Wendetag‘ – unterstreicht meine Einschätzung, daß sich durchgängige Anti-Stimmungen und Wut auf alles – auf mich, den Kurs, die Umschulungsmaßnahme, die gesellschaftlichen Zumutungen – lösen.

„Die Stimmung bei uns war im Keller. Durch die Diskussion konnte jeder seinen Müll abladen. Dann hat sich der Unterricht gewandelt. Heute gehe ich nach Hause und kann sagen: ‚Doch, ich habe was gelernt!‘ Ich denke über deinen Satz nach: ‚Ihr arbeitet alle rege mit, und doch geht ihr mit einer negativen Stimmung nach Hause!‘ An diese Form des Unterrichts müssen wir uns erst gewöhnen. Ich verstehe diese Form jetzt besser.“

„Wir haben es geschafft, auf einen Nenner zu kommen. Du hast es verstanden, uns ein Berufsbild zu geben, mit dem wir etwas anfangen können. Mit dem Vortrag am Vormittag wurden uns Perspektiven gezeigt und Motivationen aufgebaut. Das Mittwochskrisengespräch trug dazu bei, daß sich der Knoten löste und wir uns wesentlich besser verstanden und nicht wieder aneinander vorbei redeten. Ausgezeichnete Rhetorik und Methodik. gutes Argumentieren.“

Bei der Durchsicht der Feed-back-Zettel bin ich erleichtert. Es war richtig, daß ich das Programm umgestellt und das ursprüngliche Thema „Soziale Ungleichheit“ fallenge-

lassen habe. Bei den Planungsvorschlägen für morgen wiederholen sich Aussagen: „Wir machen morgen in dieser Form weiter“. Nach der ersten Freude merke ich, daß ich unter Druck gerate. Morgen muß es mindestens so gut laufen wie heute, oder es müssen sogar – sind es meine eigenen Ansprüche oder lese ich es zwischen den Zeilen? – noch intensivere Lernerfahrungen mit meiner Unterstützung ermöglicht werden. Der Druck verstärkt sich, weil Freitag mein letzter Unterrichtstag ist und ich auf jeden Fall Angefangenes abrunden möchte. Ich möchte es schaffen, daß konkrete Vorschläge für eine Umgestaltung der Unterrichtsarbeit entwickelt werden. In der nächsten Woche kommen neue Themen, neue Dozenten, und ich möchte unsere Erfolge nicht versickern lassen. Dieser Konflikt ist mir allzu bekannt: prozeßorientiert arbeiten und nicht auf greifbare Ergebnisse verzichten wollen. Ich werde ungeduldig und treibe an.

Im nächsten Schritt – mein letzter Tag im Kurs – bitte ich jede Person, für sich die Frage zu beantworten, welche Bedingungen erforderlich sind, um in der Maßnahme zufrieden sein zu können. Konkrete Utopien sind erwünscht. Auf der Wunschliste soll vermerkt werden, was persönlich unverzichtbar und was weniger wichtig ist. Ich möchte den Bogen von der zuvor massiv und umfassend vorgetragenen Kritik hin zu realisierbaren Veränderungsperspektiven in der Umschulungsmaßnahme spannen. Ein bunter Strauß von Wünschen wird mitgeteilt. Amüsante, verrückte Projekte zu neuen Lernumwelten werden beschrieben. Ich kann zwischendurch nicht mehr aufmerksam zuhören, weil mir die Zeit davonläuft. Vieles bezieht sich auf

- eine veränderte Raumgestaltung (Bilder, Grünpflanzen, Ruhezonen),
- verbesserte Arbeitsmöglichkeiten (Bibliothek, Studententag, Exkursionen) und
- Wünsche nach Anleitung und Orientierung zur besseren Berufsvorbereitung.

Das Interesse an „handfestem Wissen“ kommt erneut ins Spiel. Ich bin leicht gereizt, weil ich nicht zu fassen bekomme, was mit diesem Wunsch verbunden ist. Ist es ein Rückgriff auf bisher vertraute Lernformen? Sollen bestimmte Themen aufgegriffen werden? Was soll wozu gewußt werden? Ich hake ein. Ich fluche innerlich, weil ich es nicht lassen kann, eine neue Lernchance aufzugreifen, obwohl schon jetzt die Zeit drängt.

Ich schlage einen Zwischenschritt vor. Ich komme auf die Idee, auszuprobieren, ob die individuelle Bildersprache näheren Aufschluß als die gesprochene Sprache geben kann. Weil der Begriff „Wissen“ als Abstraktum zu farblos oder noch ein Knochen ohne Fleisch ist, rege ich an, dem Wissen in der eigenen Vorstellung eine Farbe zu geben und/oder es „fleischlich“ zu imaginieren. Zögern, Unverständnis, Rückfragen. Ich versuche es mit Beispielen. Ich beschreibe meine eigenen momentanen Bilder: „‚Wissen‘ ist gleichzusetzen mit der Farbe ‚grau‘, grau wirkt auf mich unbestimmt, unentschieden. Ich weiß augenblicklich nicht, welches Wissen mir nützen könnte ...“ Beim wiederholten Erklärungsversuch gebe ich fast auf, aber ich spüre, daß der Kontakt zu den Teilnehmenden so gut ist, daß sie sich bemühen, meine ‚neuen Verrücktheiten‘ zu tolerieren. Ich vergewissere mich, ob das kleine

Experiment gelingt. Vor allem Farben werden gefunden. Von der Fleischabteilung sind mir noch die „gefüllten Rippchen“ und das „Hackfleisch“ in Erinnerung. Sie werden als Ausgangspunkt genutzt, um innere Bildgeschichten entstehen zu lassen. In der Gesprächsrunde erzählen erst diejenigen, die mit ihrer Phantasietätigkeit zufrieden sind. Andere schließen sich an. Einleitend hören wir häufig: „Also bei mir hat das nicht so richtig geklappt, aber ...“ Und dann folgen faszinierende Beschreibungen.

„Ich habe mich auf einer Wiese gesehen, vor mir ein Graben, ich möchte auf die andere Seite springen, aber ich traue mich nicht.“

„Vor mir lag ein großes vielfarbiges Puzzle, die untere Hälfte konnte ich halbwegs zusammenlegen, aber was danach kommen sollte, war völlig chaotisch; ich wollte immer systematisch vorgehen und nicht einfach irgendwo weitermachen, obwohl das wohl geklappt hätte.“

„Ich sehe im Nebel Menschen, zu denen ich hin möchte, aber ich erkenne sie nicht richtig. Ich laufe ständig hin und her, bis ich völlig erschöpft bin.“

„Ich bin vom Grün ausgegangen. Das ist eine optimistische Farbe für mich. Ich bin auf einer Blumenwiese, ich bin zufrieden, es gibt viele Wege, die ich entlangspazieren könnte, aber welchen Weg wähle ich?“

„Ich habe ein spezielles Hausputzverfahren vor Augen gehabt. Da müssen viele Schichten abgetragen werden, bevor man zum Untergrund kommt, um neu verputzen zu können.“

„Ich weiß nicht. Ich habe nur zwei leere weiße Blätter gesehen. Das eine ist für mich die Vergangenheit, das andere die Gegenwart.“

„Ich habe mir bunte Farben vorgestellt. Daraus ist ein Webmuster entstanden. Jede Farbe wurde gebraucht. Ich habe dabei an die verschiedenen Menschen in der Gruppe gedacht und daß sie alle wichtig sind.“

In einer Schlußrunde rege ich an, Bezüge zwischen Bild und eigenem Verhalten herzustellen. Ich lenke auf die Ausgangsfrage „Wozu brauche ich Wissen?“ zurück. Einige Teilnehmer thematisieren von sich, was ihnen das Bild mitgeteilt hat. „Ich frag‘ mich, ob ich diese Umschulung mitmachen soll oder ob es besser ist, auf was Zukunftssicheres zu warten. Schließlich zahlt das Arbeitsamt nur einmal. Da laß ich mich auf nichts richtig ein; ich bin immer auf dem Sprung, bin unzufrieden. Ich mach mich selbst verrückt.“ Die Stimmung in der Gruppe ist aufgeregt, angekratzt. Die Faszination, daß „Wissen“ persönlich mehr meint, als ein vorgeschriebenes Lehrbuch beinhalten kann, steckt an.

Abschließend mache ich einige Anmerkungen zur Gehirnforschung, zur Funktion der linken und rechten Gehirnhälfte, um die verhaltensrelevante Wirkung von assoziativen Bildern zu erklären. Ich akzeptiere, daß die TeilnehmerInnen Erlebtes leichter integrieren können, wenn ergänzend Erläuterungen angeboten werden.

Im weiteren Verfahren werden kleine Gruppen gebildet, die ein gemeinsames Konzept zur gewünschten Lernumwelt in der Umschulungsmaßnahme entwickeln sollen. Alles ist unter einer Einschränkung erlaubt: Jedes Gruppenmitglied muß mindestens einen zentralen Wunsch einbringen können. Mit der Frage, welche Bedürfnisse hinter einzelnen Utopieelementen aufzuspüren sind und ob bereits heute Wege vorstellbar sind, sie praktisch umzusetzen, wird die Gruppenarbeit abgeschlossen. Die Gruppen kommen mit der vorgegebenen Zeit nicht aus. Betriebsam wird diskutiert und aufgeschrieben, teilweise gemalt, skizziert. Als die Ergebnisse vorgestellt werden, fehlt es mir an Muße, alle Feinheiten aufzunehmen. Ich bin nur besorgt, eine Struktur für alle Ideen zu finden. Ich muß vorschnell systematisieren, um Absprachen zur Umsetzung treffen zu können. Spaß und Genuß verflüchtigen sich zugunsten von Arbeitseffizienz. Um Zeit zu sparen, wechsele ich Arbeitstechniken und produziere statt dessen Durcheinander. Die Gruppe bleibt kooperativ und diszipliniert. Zügig werden Aufgaben und Zuständigkeiten übernommen: Kontakte zur Leitung und zu Dozenten, Raumnutzung, Gesprächsregeln, Pausengestaltung, Essen ... An dieser Stelle fällt mir plötzlich auf, daß das ihnen vertraute Wort „Kollektiv“ Verwendung findet. Habe ich es vorher überhört? Auf den ersten Blick gefällt mir am besten, daß zum Bereich „Entspannung und Bewegung“ etliche Vorschläge notiert sind und die Physiotherapeutin in der Gruppe und zwei andere Frauen gemeinsame Versuche anregen wollen. Ich selbst bin mit diesem Programmpunkt einfach aufgelaufen ... Die Umschreibung „hohles Rumgehops“, ein Beitrag aus der Feed-back-Runde, ist in der Woche zum Bonmot geworden! Bevor mir die Luft ausgeht, schaffe ich noch, zu erläutern, daß wir gemeinsam Elemente einer Projektarbeit ausprobiert haben, eine Arbeitsweise, die für die Praxisphase innerhalb der Umschulungsmaßnahme vorgesehen ist.

Es bleibt noch eine halbe Stunde für das Abschlußgespräch: „Was nehme ich mit, was lasse ich besser hier?“ Zwei Äußerungen haben sich mir besonders eingepägt:

- „Ich habe das Gefühl, daß sich ein Fenster geöffnet hat und ich wieder atmen kann.“
- „Ich werde genauer gucken, was ich von meiner alten DDR-Identität behalten will, anstatt sie einfach auf den Müll zu schmeißen.“

Mir fällt der Abschied schwer.

Beim Schreiben tauchen immer wieder neue Gedanken auf. Ich kann mich auch jetzt nicht trennen.



문서 번호 35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민사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 년 2 월 4 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연방정부, 민사당

내용:

이 문서는 민사당이 제출한 신연방주 여성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의 질의는 시장경제로 체제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해를 보았으며 구조변화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조치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체계적으로 차별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자의 60%가 여성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90%에 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음을 설명하였다. 삼백육십억 마르크가 구동독지역의 노동정책에 투자되었고 다양한 재교육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그리고 직업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창업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 년에 도제로 직업훈련을 시작한 사람 Azubi 중에 여성의 비율은 37.4%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답변을 통해 나아가 조기정년퇴직한 여성의 연금문제, 대학졸업 여성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였다.

출처: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Drucksache 12/4262





##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Abgeordneten Petra Bläss, Dr. Barbara Höll  
und der Gruppe der PDS/Linke Liste  
— Drucksache 12/3089 —

### Lage der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Allgemeine Vorbemerkungen

Bereits Ende 1990 stellte der EG-Ausschuß für die Rechte der Frau in seinem „Bericht über den Binnenmarkt 1992 und seine Auswirkungen für die Frauen in der EG“ fest:

„Wenn Gleichstellung nicht bis Ende 1992 verwirklicht sein wird, werden vor allem die Frauen in den ärmeren Regionen der EG stärker unter den Auswirkungen des Binnenmarktes leiden/davon betroffen sein.“ Und das bedeutet selbstverständlich, daß es auch dann die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ein werden, die es ein weiteres Mal treffen wird.

Zwei Jahre sind seitdem vergangen, ohne daß substantielle Veränderungen eingeleitet wurden, um die negativen Auswirkungen für Frauen abzuwenden. Im Gegenteil. In den letzten Monaten wird immer deutlicher, daß vor allem Frauen – und hier besonders di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 diejenigen sind, auf deren Rücken die ökonomischen Probleme der marktwirtschaftlichen Umstrukturierung und deren soziale Folgeprozesse ausgetragen werden.

Zurück an Heim und Herd – das ist inzwischen eine alternativlose Aussicht für viele Frauen, für die in der DDR die eigene Berufstätigkeit und damit die ökonomische Unabhängigkeit zu einer Selbstverständlichkeit geworden war. Auch wenn die Vereinbarkeit von Berufstätigkeit und unbezahlter, von Frauen geleisteter Arbeit aufgrund der auch in der DDR praktizierten geschlechtsspezifischen Arbeitsteilung für Frauen eine Vielfachbelastung bedeutete, sind die meisten Frauen heute weder bereit noch ökonomisch in der Lage, auf die eigene Berufstätigkeit zu verzichten. Trotzdem sehen sie sich jetzt massiv mit diesem Problem konfrontiert.

Die soziale Infrastruktur, die in der DDR als wesentliche Voraussetzung für die Berufstätigkeit von Frauen umfangreich ausgestaltet war, wird mehr und mehr ab-

gebaut. Das betrifft in besonderem Maße Kinderbetreuungseinrichtungen aller Art, ohne die Erziehende weder einer Vollzeiterwerbstätigkeit nachgehen noch an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teilnehmen können.

Die monatlichen Arbeitsmarktberichte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eigen eine sich deutlich verschärfende Tendenz zur Herausdrängung der Frauen aus der Erwerbstätigkeit. Schon stellen Frauen mit rund 60 Prozent einen überproportionalen Anteil an den Arbeitslos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ährend ihr Anteil an den wiedervermittelten Erwerbslosen weit unter dem Durchschnitt liegt, obwohl Frauen in viel höherem Maße an Umschulung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teilnehmen als Männer. Angesichts der fehlenden Konzepte für die bereits in Gang befindlichen rasanten Umstrukturierungsprozesse ist es gegenwärtig nicht abzusehen, daß durch Umschulung und Fortbildung die Möglichkeiten einer Vermittlung wirklich erhöht werden.

Ersetzt werden soll die fehlende soziale Infrastruktur durch Wiedereinstiegsprogramme für Frauen nach der Familienphase, ohne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ar nicht wegen der Kindererziehung freiwillig aus dem Berufsleben ausgestiegen, sondern Opfer der Verdrängungsmechanismen der kapitalistischen Marktwirtschaft geworden sind. Die angebotenen Fort- und Weiterbildungsprogramme, für Westmütter konzipiert, sind der Situation im Osten in keiner Weise angemessen. Sie berücksichtigen weder das vorhandene hohe Qualifikationsniveau der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och die für sie bestehende ökonomische Notwendigkeit, schnell und nicht erst in zwei Jahren wieder einen Arbeitsplatz zu finden.

Die auch offiziell immer öfter geäußerte Meinung, daß die in der DDR geförderte hohe Erwerbsquote von Frauen nach der Umstrukturierung nicht mehr gehal-

---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rauen und Jugend vom 3. Februar 1993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ten werden könnte, zeigt deutlich das angestrebte Ziel: d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übliche strukturelle Diskriminierung von Frauen aufgrund ihres Geschlechts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zusetzen. Das beginnt bei der geringer gewordenen Zahl von Ausbildungsplätzen für weibliche Auszubildende, setzt sich fort im rapide gesunkenen Anteil weiblicher Studierender und kulminiert in der unverhältnismäßig hohen Anzahl erwerbsloser Frauen.

Mittels systematischer Diskriminierung werden die Frauen aus dem Erwerbsleben ausgeschlossen. Im Ergebnis der gegenwärtigen Entwicklung besteht die Gefahr, daß viele erwerbslose Frauen die Schuld für ihre Arbeitslosigkeit bei sich selbst suchen und sich resigniert in den Haushalt zurückziehen werden.

Dies alles läuft dem Gleichberechtigungsgrundsatz des Artikels 3 Abs. 2 GG zuwider."

#### Vorbemerkung

1. Die Situation der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vor allem durch den wirtschaftlichen Umstrukturierungsprozeß von der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geprägt. Dieser Prozeß ist mit einem notwendigen Arbeitsplatzabbau verbunden, der seine Ursachen in der zerrütteten und veralteten Wirtschaft der ehemaligen DDR hat, die zudem noch eine hohe verdeckte Arbeitslosigkeit aufwies. Die verdeckte Arbeitslosigkeit wurde im Verlauf der Umstrukturierung zu einer offenen Arbeitslosigkeit. Hiervon waren Frauen ohne Zweifel in besonderem Maße betroffen. Dies hat verschiedene Ursachen:

- Frauen sind häufig in Wirtschaftsbereichen tätig, die in besonderem Maße vom Arbeitsplatzabbau betroffen sind, wie z. B. Textil- und Bekleidungsindustrie, Nahrungs- und Genußmittelindustrie, Chemie- und Leichtindustrie und die Landwirtschaft.
- Frauen sind auf weniger qualifizierten Arbeitsplätzen beschäftigt, die in einer marktwirtschaftlichen Wettbewerbssituation einem erhöhten Rationalisierungsdruck ausgesetzt sind. Hinzu kommt, daß Frauen, die einmal arbeitslos geworden sind, es schwerer als Männer haben, wieder einen Arbeitsplatz zu bekommen. Es muß auch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für eine Übergangszeit noch mehr unrentable Arbeitsplätze wegfallen werden, als neue, wettbewerbsfähige entstehen.

2. Diese Entwicklungen sind für viele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shalb schwer zu verarbeiten, da für sie generell die Erwerbstätigkeit einen hohen Stellenwert hat. Dies galt für die Vergangenheit und dies gilt gegenwärtig. Für diese Frauen ist Erwerbstätigkeit selbstverständlich und unverzichtbar. Schon aus wirtschaftlichen Gründen sehen die meisten Frauen eine Notwendigkeit, zum Familieneinkommen beizutragen. Zwei Drittel der Frauen würden jedoch auch dann erwerbstätig werden, wenn sie das Geld nicht benötigen. Fast alle Frauen finden es gut, wenn beide Partner berufstätig sind.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geht davon aus, daß das Interesse der Frauen an einem kontinuier-

lichen Berufsverlauf groß ist. Insoweit sind die sozialen Überbrückungs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von besonderer Bedeutung. In einem bisher nicht gekannten Ausmaß wurden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Aufwendungen für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gemacht. Für das Haushaltsjahr 1992 standen mit 36 Mrd. DM Gelder in doppelter Höhe wie für die alten Länder zur Verfügung. Davon flossen allein 11 Mrd. DM in die Förd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Von den angebotenen Qualifizierungsmaßnahmen haben Frauen in besonderer Weise Gebrauch gemacht. Ihr Anteil beträgt gegenwärtig über 60 %, allein 1991 hat eine halbe Million Frauen a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teilgenommen. Die Weiterbildungsbereitschaft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hoch. Dies wird ihnen auf mittlere und längere Sicht angesichts des steigenden Bedarfs an Fachkräften zugute kommen. Insbesondere der stark expandierende Dienstleistungssektor bietet für Frauen gut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Der Anteil der Frauen an AB-Maßnahmen liegt gegenwärtig bei 44,6 %. Die Bundesregierung geht davon aus, daß dieser Anteil gesteigert werden kann. Nach dem inzwischen geänderten Arbeitsförderungsgesetz sollen Frauen an allen Maßnahmen entsprechend ihrem Anteil an den Arbeitslosen beteiligt werden.

3. Immer mehr Frauen sehen in einer eigenen Existenzgründung eine erfolgversprechende Alternative zu einer abhängigen Beschäftigung. Die Bundesregierung unterstützt Existenzgründungen mit umfangreichen Fördermaßnahmen (Eigenkapitalhilfe-Programm, ERP-Existenzgründungsprogramme, Ansparzuschüsse und Beratungsförderung). Zur Stärkung der Gründungsbereitschaft sind zudem die Programm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für eine Übergangszeit mit besonderen Förderkonditionen ausgestattet. Die Bundesregierung geht davon aus, daß etwa 40 % von 300 000 Existenzgründungen von Frauen vorgenommen worden sind. Dieser Anteil übertrifft 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er etwa bei 33 % liegt.

In der Phase des wirtschaftlichen Umbruchs ist es besonders wichtig, daß bei allgemeinen Fördermaßnahmen spezifische Frauenanliegen durch Akzentsetzungen berücksichtigt werden: So gehört zu den Fördervoraussetzungen im Rahmen der Bund-Länder-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auch die Verbesserung der Erwerbstätigenstruktur, insbesondere auch das Arbeitsplatzangebot für Frauen. Die Durchführung der Gemeinschaftsaufgabe ist nach der grundgesetzlichen Aufgabenverteilung Sache der Länder. Die Bundesregierung geht davon aus, daß die Länder die Möglichkeiten des Rahmenplans der Gemeinschaftsaufgabe zur Förderung von Arbeitsplätzen für Frauen ausschöpfen.

4. Frauen sind aufgrund der geänderten Lebensbedingungen in besonderer Weise auf Beratung und Information angewiesen. Deshalb kommt dem Beratungsangebot eine besondere Bedeutung zu. Das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hat beispielsweis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jeweils eine Modellberatungsstelle „Information und Beratung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den geänderten Lebens- und Arbeitsbedingungen“ eingerichtet. In Berlin wurde ein bereits vorhandenes Beratungsangebot auf den Ostteil der Stadt ausgedehnt. Die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arbeiten dabei mit örtlichen Institutionen und Einrichtungen wie Arbeitsämtern, Weiterbildungsträgern, Kammern und kommunalen Gleichstellungsbeauftragten eng zusammen, um sicherzustellen, daß beim Aufbau regionaler Infrastrukturen auch frauenspezifische Belange angemessen berücksichtigt werden. Die Beratungsstellen ermöglichen auch ein dezentrales Beratungs- und Informationsangebot in städtischen und ländlichen Regionen. Diese Maßnahmen werden eindrucksvoll von den einzelnen Landesregier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gänzt. Zusammen hat sich hier ein dichtes Netz an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etabliert, das eine wirkungsvolle Hilfe für Frauen darstellt.

5. Die Bundesregierung hält es für notwendig, daß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hohes quantitatives Niveau an Betreuungs- und Kindergarteneinrichtungen erhalten bleibt. Dazu hat vor allem auch die finanzielle Unterstützung durch den Bund in Höhe von 1 Mrd. DM nach der Wiedervereinigung beigetragen. Allerdings ist es notwendig, daß nach der grundgesetzlichen Aufgabenverteilung die Länder und Gemeinden für ein ausreichendes Platzangebot sor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das Angebot mit 95 % für die drei- bis sechsjährigen Kinder insgesamt immer noch flächendeckend. Allerdings ist es auch nicht überraschend, daß sich das Verhältnis zwischen Angebot und Nachfrage dieser Einrichtungen in einer freien Gesellschaft wandelt. Insbesondere tragen dazu die Verbesserungen beim Erziehungsurlaub sowie beim Erziehungsgeld bei.
6. Die Mens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werten den Übergang von einer kommunistischen Zwangsgesellschaft in die freiheitliche, soziale Gesell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sgesamt positiv. Dies schließt nicht aus, daß es in der Phase des Überganges zu Problemen und Schwierigkeiten kommt, die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von Politik, Wirtschaft und gesellschaftlichen Kräften behoben werden müssen.

A. Berufliche Chancen für Frauen – Antidiskriminierungspolitik

1. *Berufliche Bildung und Beschäftigungschancen von Frauen*

- 1.1 Wie hoch war bzw. ist der Anteil der Frauen und Mädchen an der Gesamtzahl der Auszubildenden in den Jahren 1989, 1990, 1991 und 1992 (jeweils per 1. Oktober) aufgeschlüsselt nach Berufsgruppen, und ab 1990 zusätzlich nach Ländern?

Der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an der Gesamtzahl der Auszubildenden im Gebiet der neuen Länder betrug 1989 40,6 %, 1990 38,1 % und 1991 37,4 % (vorläufige Zahl). Für 1992 liegen die Zahlen noch nicht vor.

Eine Übersicht über den Anteil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an neuen Verträgen nach Ausbildungsbereichen in der DDR für 1989 enthält der Berufsbildungsbericht 1991, Drucksache 12/348, Übersicht 25. Hinsichtlich der Aufschlüsselung nach Ländern und Berufsgruppen für das Jahr 1990 wird auf die Grund- und Strukturdaten des Bundesminister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Ausgabe 1991/1992 S. 106) verwiesen.

- 1.2 Wie viele (absolut und relativ) Ausbildungsstellen suchende Frauen und Mädchen haben 1990, 1991 und 1992 eine Ausbildungsstelle erhalten (wie viele davo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was ist mit dem „Rest“ geschehen?

Nach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hatten sich 1992 72 276 weibliche Ausbildungsplatzbewerber beim Arbeitsamt gemeldet (1991: 73 862). Zum Ende des Berichtsjahres 1992 standen den 649 (1991: 1 359) unvermittelten weiblichen und den 570 (1991: 1 062) unvermittelten männlichen Ausbildungsplatzbewerbern insgesamt noch 3 232 (1991: 5 811) unbesetzte Berufsausbildungsstellen gegenüber.

Hinsichtlich der Wanderung von Ausbildungsplatzsuchenden in die alten Bundesländer hat eine Erheb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ergeben, daß rund 19 000 Jugendliche aus den neuen Ländern 1992 ein Ausbildungsverhältnis in den alten Ländern begonnen haben. Ein Vergleich mit den Vorjahresergebnissen zeigt, daß die Zahl von Jugendlichen, die einen neuen Ausbildungsplatz in den alten Ländern angenommen haben, 1992 um rund 3 000 zurückgegangen sein dürfte.

- 1.3 Wie sieht die Versorgung von Lehrstellenbewerberinnen im Vergleich zu den Lehrstellenbewerbern in den Jahren 1990 bis 1992 aus, aufgeschlüsselt nach Ländern und Ausbildungsarten (betrieblich, außerbetrieblich, überbetrieblich, vollzeitschulisch)?

In den Ausbildungsjahren 1990/91 und 1991/92 ist es durch gemeinsame Anstrengungen des Bundes, der Länder und aller an der Berufsausbildung Beteiligten gelungen, praktisch allen Jugendlichen, die einen Ausbildungsplatz suchten, eine Ausbildungsstelle zu vermitteln.

Ende September 1992 waren bei den Arbeitsämtern nur noch 1 219 nicht vermittelte Ausbildungsplatzbewerber gemeldet (570 männliche und 649 weibliche Bewerber); dem standen noch 3 232 unbesetzte betriebliche Ausbildungsstellen gegenüber. Die meisten Jugendlichen ohne Ausbildungsplatz hatten zu diesem Zeitpunkt bereits ein Ausbildungsplatzangebot der Berufsberatung vorliegen.

Aus der Statistik über die Arbeit der Berufsberatung ergeben sich über den Beratungsverlauf und den Abschluß der Beratungsfälle die folgenden zusätzlichen Daten; bei der Bewertung dieser Angaben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unter den beratenen Bewerbern und Bewerberinnen auch viele Jugendliche sind, die ihre Absicht, im Jahr der Beratung ein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aufzunehmen, wieder aufgegeben haben, z. B. weil sie ihren Wehr- oder Zivildienst antreten oder ein Freiwilliges Soziales Jahr machen. Andere Bewerber und Bewerberinnen wollten ursprünglich den Betrieb wechseln, haben sich aber für einen Verbleib im bisherigen Ausbildungsverhältnis entschieden.

1992 konnten 41 757 (1991: 37 809) männliche und 36 739 (1991: 34 743) weibliche Bewerber in ein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sstelle vermittelt werden.

2 687 (1991: 1 932) männliche und 1 555 (1991: 1 196) weibliche Bewerber begannen eine Berufsausbildung nach § 40 c Abs. 2 AFG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von ausländischen Lernbeeinträchtigten oder sozial benachteiligten Auszubildenden) sowie 5 672 (1991: 17 060) männliche und 10 330 (1991: 17 847) weibliche Bewerber eine Berufsausbildung gemäß § 40 c Abs. 4 AFG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für unvermittelte Ausbildungsplatzbewerb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eiterhin haben 1 600 (1991: 2 462) männliche und 1 094 (1991: 1 732) weibliche Jugendliche eine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 aufgenommen. Näheres siehe nachstehende Tabelle.

Über die regionale Ausbildungs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gibt der Berufsbildungsbericht 1992 (S. 201) einen Überblick.

Bundesanstalt für Arbeit  
– Statistik –  
– IIb3 – 4231/4233 –

Anlage zu Antwort A 1.3

Tabelle 6

Bei den Arbeitsämtern gemeldete Bewerber nach Art der Erledigung des Beratungsfalles

Berichtsjahr 1991/92  
Region: Bundesgebiet Ost

Art der Erledigung	Bewerber					
	insgesamt		männlich		weiblich	
	absolut 001	% 002	absolut 003	% 004	absolut 005	% 006
Einmündung in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sstelle	78 496	56,7	41 757	63,2	36 739	50,8
Einmündung in Berufs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r Einrichtung gemäß § 40 c Abs. 2 AFG	4 242	3,1	2 687	4,1	1 555	2,2
Einmündung in Berufsausbildung in überbetrieblicher Einrichtung gemäß § 40 c Abs. 4 AFG	16 002	11,6	5 672	8,6	10 330	14,3
Einmündung in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	2 694	1,9	1 600	2,4	1 094	1,5
Schulbesuch	17 871	12,9	5 915	9,0	11 956	16,5
Arbeitsstelle	2 191	1,6	969	1,5	1 222	1,7
Sonstiger Verbleib	15 627	11,3	6 896	10,4	8 731	12,1
Noch nicht vermittelt	1 219	0,9	570	0,9	649	0,9
Insgesamt	138 342	100,0	66 066	100,0	72 276	100,0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Ergebnisse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Berichtsjahr 1991/1992.

- 1.4 Wie schätzt die Bundesregierung die Beschäftigungsperspektiven weiblicher Auszubildender im Zeitraum 1990 bis 1992 ein, aufgeschlüsselt nach Berufsgruppen und Ländern?

Aus einer gemeinsamen Stichprobenbefrag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BiBB) und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vom Winter 1991/92 ergibt sich, daß beim Eintritt in das Erwerbsleben nach Abschluß ein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sog. zweite Schwelle) bislang keine erkennbaren Probleme aufgetreten sind. Über die weitere Entwicklung der Arbeitsmarktsituation dieses Personenkreises liegen der Bundesregierung keine Erkenntnisse vor.

- 1.5 Inwieweit liegen den regionalen Ausbildungsplatzangeboten regionale Bedarfs- oder Arbeitsmarktprognosen und Wirtschaftsförderungskonzepte zugrunde?

Der marktwirtschaftlich strukturierte Ausbildungsstellenmarkt orientiert sich nicht in erster Linie an Bedarfs- und Arbeitsmarktprognosen oder Wirtschaftsförderungskonzepten. Entscheidend sind vielmehr die Personalbedarfs-Planungen der einzelnen Unternehmen, die wesentlich von den Erwartungen und Einschätzungen allgemeiner wirtschaftlicher und spezieller betrieblicher Zukunftschancen mitbestimmt werden. Das sich aus den Einzelangeboten der Betriebe ergebende Gesamtangebot an Ausbildungsplätzen führt erfahrungsgemäß zu einem deutlich geringeren Ungleichgewicht zwischen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system, als dies durch planwirtschaftliche Maßnahmen erreichbar wäre.

Sofern die Wirtschaft ihrer Ausbildungsverpflichtung noch nicht in vollem Umfang entsprechen kann, werden vor allem durch die Länder und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zusätzliche Ausbildungsmöglichkeiten angeboten, die sich dann auch an Planungsprognosen und -konzepten der Region orientieren.

Es ist Sache der Regionen (Landkreise, Gemeinden), Wirtschaftsförderungskonzepte zu entwickeln, wenn sie dies für sinnvoll und notwendig halten.

- 1.6 Wie wird 1992 im Vergleich zu 1991 die Schaffung von Ausbildungsplätzen (betrieblich, außerbetrieblich, überbetrieblich) durch die Bundesregierung gefördert, und welche Fördermaßnahmen sind 1992 für die Schaffung von Ausbildungsplätzen für weibliche Auszubildende vorgesehen?

Die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im Jahre 1992 dienten dazu, das Angebot a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zu erweitern und die Qualität der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zu verbessern. Hierzu gehören insbesondere der Aufbau eines Netzes überbetrieblicher Ausbildungsstätten, Maßnahmen zur Qualifizierung des Ausbildungspersonals und der

Innovationstransfer. Über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ÜAS) werden abhängig von ihrer vorherrschenden Ausbildungs- oder Fortbildungsfunktion vo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oder vo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gefördert. Mittelfristig soll in den neuen Ländern ein dem bisherigen Bundesgebiet vergleichbarer Ausbaustand erreicht werden.

Die Informations- und Motivationskampagne für mehr Ausbildungsplätze fördert die Eigeninitiative der Jugendlichen, die einen Ausbildungsplatz suchen, und das Interesse der Unternehmen, mehr Ausbildungsplätze anzubieten. Bei Handwerkskammern und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werden außerdem über 100 Ausbildungsberater finanziell gefördert.

Nachdem 1991 durch das Ausbildungsplatzförderungsprogramm – Ost der Bundesregierung (APF-BNBM) rund 30 000 Ausbildungsplätze gefördert wurden, haben 1992 insbesondere die verschiedenen Landesprogramme zur Schaffung vo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beigetragen.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förder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sbildungsmaßnahmen in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en, soweit das Angebot a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nicht ausreichte. Mädchen wurden dabei vorrangig berücksichtigt.

- 1.7 Wie viele Auszubildende haben nach Abschluß ihrer Ausbildung in den Jahren 1990, 1991 und 1992 eine qualifikationsgemäße Erwerbstätigkeit aufgenommen, wie viele sind arbeitslos geworden, und wie ist der „sonstige Verbleib“ aufgeschlüsselt nach männlich/weiblich, Berufsgruppen und Ländern?

Vergleiche Antwort zu Frage A. 1.4.

- 1.8 In welchem Maße erhielten Hochschulabsolventinnen 1990, 1991 und 1992 im Vergleich zu Hochschulabsolventen nach abgeschlossenem Studium einen Erwerbsarbeitsplatz, der ihrer Qualifikation entspricht?

Repräsentative Aussagen über den Verbleib der Hochschulabsolventen der neuen Bundesländer sind derzeit mangels empirischer Unterlagen nicht möglich.

- 1.9 Wie hoch war/ist der Anteil der Wissenschaftlerinnen, die an der Hochschule berufsmäßig verbleiben, im Verhältnis zu ihren männlichen Kollegen
-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in den Jahren 1990 bis 1992?

In den alten w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steht eine geschlechtsspezifische Qualifikationspyramide: Jede Stufe – Studienanfänger, Hochschulprüfungen, Promotion, Habilitation, Berufung – ist mit einem

Rückgang des Frauenanteils verbunden. Dabei ist der Frauenanteil in den neuen Ländern durchgehend günstiger als in den alten.

#### Übersicht

Frauenanteil (in %) an den Hoch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S 1990/91 alte Bundesländer
Hochschulprüfungen	37
Doktorprüfungen	28
Habilitationen	10
wiss. Mitarbeiter	22
Hochschullehrer	6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sind zum derzeitigen Zeitpunkt noch keine genauen Angaben des Frauenanteils an Prüfungen und wissenschaftlichem Personal möglich.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stehen Zahlen zum WS 1991/92 noch nicht vollständig zur Verfügung.

Die amtliche Statistik wird voraussichtlich März/April 1993 veröffentlicht werden.

- 1.10 Welche Angebote von Weiterbildungsinstitutionen gibt es speziell für Frauen, inwieweit beinhalten sie qualifizierende Maßnahmen, und welcher Art sind diese (aufgeschlüsselt nach Ländern)?

Bei Vorliegen der Fördervoraussetzungen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steht Frauen generell das gesamte Spektrum beruflicher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offen.

Allen Frauen stehen daneben Angebote gezielter Informationsveranstaltungen der Arbeitsämter mit genauer Beschreibung der Bildungsinhalte als Vorbereitung auf angestrebte Umschulungen zur Verfügung.

Die Bundesregierung verfügt angesichts der pluralen Weiterbildungslandschaft über keine umfassende Statistik zum Angebot aller Weiterbildungsträg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geschlüsselt nach Geschlecht und Ländern.

Zur Entwicklung von Qualifizierungskonzepten speziell für Weiterbildungsmaßnahmen für Frauen förderte die Bundesregierung verschiedene Projekte, z. B. „Informationstechnische Weiterbildung für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ein Multiplikatorinnen-Projekt“ oder „Einstiegsmodule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von Frau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Darüber hinaus fördert die Bundesregierung gezielt Untersuchungen und Entwicklungsvorhaben zur Weiterbildung vo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 auf eine frauengerechte Ausgestaltung von Weiterbildungsangeboten hinwirken soll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auch auf die Empfehlung der Konzentrierten Aktion Weiterbildung (KAW) hinzuweisen.

- 1.11 Wie viele Frauen (aufgeschlüsselt nach Altersgruppen) nahmen 1990, 1991 und 1992 an Weiterbildungsmaßnahmen teil, welche Qualifikation haben sie erworben, und wie viele haben im Rahm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daran teilgenommen (aufgeschlüsselt nach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traten im Jahr 1991 ca. 250 000 Frauen in berufliche Bildungsmaßnahmen ein (42 % aller Eintrit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aren es ca. 510 000 (57 %). Im Verlauf des Jahres 1992 betragen die entsprechenden Zahlen 246 000 = 43 % bzw. 550 000 = 62 %.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pielen Fortbildungen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i den Maßnahmen der beruflichen Qualifizierung die größte Rolle. Dabei standen sonstige Maßnahmen zur Feststellung, Erhaltung, Erweiterung und Anpassung der beruflichen Kenntnisse mit 66 % aller Eintritte in Fortbildungen im Vordergrund. Der Anteil der Frauen an diesen Maßnahmen lag bei 64,5 %.

Der Anteil der Frauen an der beruflichen Umschulung lag 1991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ei knapp 51 % u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i 65,4 %.

Bei den Eintritten in betriebliche Einarbeitungen wiesen die Frauen einen niedrigeren Anteil als die Männer auf. Er betrug im Jahr 1992 für die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 gleichermaßen rd. 36 %.

Eine Aufschlüsselung für zurückliegende Zeiträume sowie nach Altersgruppen ist nicht möglich.

## 2. Arbeitsmarktsituation von Frauen

- 2.1 Wie viele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ind gegenwärtig erwerbstätig, wie viele von ihnen sind
- Alleinstehende,
  - Alleinerziehende,
  - Verheiratete mit Kindern,
  - Verheiratete ohne Kinder?

Nach dem Mikrozensus 1991 betrug die Gesamtzahl der erwerbstätige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April 1991 3,611 Mio., davon 670 000 (18,6 %) Alleinstehende ohne Kinder, 427 000 (11,8 %) Alleinerziehende, 1,835 Mio. (50,8 %) Verheiratete und ständig Zusammenlebende mit Kindern sowie 679 000 (18,8 %) Verheiratete und ständig Zusammenlebende ohne Kinder. Neuere amtliche Daten in der Gliederung der Frage liegen nicht vor.

- 2.2 Wie hoch schätzt die Bundesregierung die Anzahl der Arbeitsplätze ein, die
- in einem weiteren Schub durch den Einsatz neuer Technologien,
  - infolge der Auswirkungen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 wegfallen werden, und wie stark sind davon Frauenarbeitsplätze betroffen?

Die Bundesregierung verspricht sich sowohl vom Einsatz neuer Technologien als auch von der Einführung des EG-Binnenmarktes positive Wachstumsimpulse und damit positive Beschäftigungsauswirkungen. Dies wird auch Frauen zugute kommen.

- 2.3 Welche Möglichkeiten sieht die Bundesregierung dafür, daß rechtzeitig qualifizierte Ersatzarbeitsplätze für Frauen geschaffen werden, und mit welchen Maßnahmen wird die Bundesregierung zu verhindern versuchen, daß die Frauenerwerbsquote noch weiter sinkt?

Vergleiche Antwort zu Frage A. 2.2.

Im übrigen wird die Bundesregierung ihre investitionsorientierte, wachstumsfördernde Wirtschafts-, Arbeitsmarkt- und Finanzpolitik, aber auch die soziale Flankierung des Umstrukturierungsprozesses fortsetzen. Dies liegt auch im Interesse der Frauen der neuen Bundesländer.

Über die Wirkung der von der Bundesregierung zugunsten der neuen Bundesländer ergriffenen Maßnahmen gibt der am 3. Juni 1992 vom Bundeskabinett verabschiedete „Erfahrung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den wichtigsten wirtschaftlichen Fördermaßnahmen der Bundesressorts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Auskunft.

Die Bundesregierung hat eine 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eingesetzt, um vorhandene Förderprogramme hinsichtlich ihrer Wirksamkeit auf 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Frauen zu überprüfen und Vorschläge für neue Initiativen zu machen. Der Bericht wird in Kürze dem Bundeskabinett vorgelegt werden.

- 2.4 Wie beur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Auswirkung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der Beschäftigungsförderungsmaßnahmen auf die Beschäftigungssituation von Frauen?

Die Politik der Bundesregierung zielt auf Chancengleichheit von Frauen und Männern am Arbeitsmarkt. Hierzu gehört auch, etwaige Ungleichgewichte durch den Einsatz arbeitsmarktpolitischer Instrumente für Frauen und Männer gleichermaßen abzufangen.

Ziel des Gesetzes zur Änderung von Fördervoraussetzungen im Arbeitsförderungsgesetz und in anderen Gesetzen, das am 1. Januar 1993 in Kraft getreten ist, ist es sicherzustellen, daß vor dem Hintergrund knapper werdender Finanzmittel die Funktionsfähigkeit und Finanzierbarkeit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Arbeitsförderung erhalten werden kann. Dafür mußten die Leistungen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zielgerichteter eingesetzt und auf das unbedingt Notwendige konzentriert werden.

Mit der in § 2 Nr. 5 AFG neu vorgesehenen Ergänzung „Frauen sollen entsprechend ihrem Anteil an den Arbeitslosen gefördert werden“ wird gleichzeitig eine weitere Verstärkung der Beteiligung von Frauen an arbeitsmarktpolitischen Maßnahmen angestrebt.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wird daher in Umsetzung der gesetzlichen Zielsetzung darauf hinwirken, Frauen an allen arbeitsmarktpolitischen Maßnahmen entsprechend ihrem Anteil an den Arbeitslosen zu beteiligen, um vorhandene Ungleichgewichte abzubauen. Gerade auch in den längerfristigen, qualifizierten Maßnahmen wird hierdurch eine Steigerung des Frauenanteils erwartet.

Zu einer größeren Beteiligung von Frauen an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werden auch die ab 1. Januar 1993 geltenden ABM-Förderungsbedingungen nach dem AFG beitragen. Danach können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is Ende 1995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bis zu 100 % gefördert werden, wenn in der Maßnahme überwiegend Arbeitnehmer beschäftigt werden, deren Unterbringung auf dem Arbeitsmarkt besonders erschwert ist. Hierzu zählen nach dem ausdrücklichen Willen des Gesetzgebers auch arbeitslose Frauen.

Zusätzlich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für Frauen werden auch durch das im 10. AFG-Änderungsgesetz neu eingerichtete Instrument Arbeitsförderung „Umwelt Ost“ (§ 249h AFG) erwartet. Dieses wird neben dem Umweltbereich auch die Beschäftigung von arbeitslosen Arbeitnehmern und Arbeitnehmerinnen im Bereich der sozialen Dienste und der freien Jugendhilfe begünstigen.

- 2.5 Wie beur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Auswirkungen einer Dezentralisierung von Arbeitsplätzen durch Heimarbeit u. ä. für die Betriebe und die betroffenen Arbeitnehmerinnen, insbesondere hinsichtlich
- des arbeitsrechtlichen Schutzes sowie der betrieblichen und überbetrieblichen Mitbestimmung,
  - der Aussichten, mit derartigen Maßnahmen die Vereinbarkeit von Berufstätigkeit und unbezahlter, von Frauen geleisteter Arbeit zu verbessern,
  - der Auswirkungen im Arbeits- und Gesundheitsschutz?

Es ist zwischen Heimarbeit im Sinne des Heimarbeitsgesetzes (HAG) und der sogenannten Telearbeit zu unterscheiden.

Heimarbeiter im Sinne des HAG sind keine Arbeitnehmer. Wegen ihrer besonderen wirtschaftlichen Schutzbedürftigkeit enthält das HAG eigene Vorschriften u. a. zu Kündigungs-, Entgelt-, Arbeitszeit- und Arbeitsschutz. Daneben sind die Heimarbeiter in den persönlichen Geltungsbereich zahlreicher arbeitsrechtlicher Schutzvorschriften einbezogen, um sie soweit wie möglich den Arbeitnehmern gleichzustellen. Nach § 6 BetrVG gelten Heimarbeiter, wenn sie in der Hauptsache für einen Betrieb arbeiten, als Arbeitnehmer dieses Betriebs mit der Folge, daß auch ihre Interessen durch den Betriebsrat vertreten werden.

In Abgrenzung zur Heimarbeit ist die Telearbeit eine Tätigkeit an externen Arbeitsplätzen, die mit informationstechnischen Endgeräten ausgestattet und mit dem Hauptbetrieb durch elektronische Kommunikations-

medien verbunden sind. Rechtlich ist der weit überwiegende Teil der Telearbeit als Arbeitsverhältnis zu qualifizieren, da die Mehrheit der Telearbeiter in einem persönlichen Abhängigkeitsverhältnis zum Arbeitgeber steht. Die betroffenen Personen unterfallen damit dem Schutz des Arbeitsrechts.

Soweit sich die konkrete Ausgestaltung der Telearbeit nicht als Arbeitsverhältnis qualifizieren läßt, kann sie je nach Ausgestaltung der Anwendung des Heimarbeitgesetzes unterfallen.

In wenigen Fällen sind in Telearbeit Beschäftigte auch freie Mitarbeiter und damit selbständig.

Sowohl die Heim- als auch die Telearbeit bieten die Möglichkeit der Arbeitszeitflexibilisierung und erleichtern damit auch die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Gleichzeitig muß allerdings auch gesehen werden, daß die Einrichtung eines dezentralen Arbeitsplatzes die Gefahr der Isolierung vom Betrieb, mangelnde soziale Kontakte sowie die Möglichkeit der Selbstausbeutung mit sich bringen. Hier sind insbesondere Betriebsräte und Gewerkschaften gefordert.

- 2.6 Welche antidiskriminierenden Strukturhilfemaßnahmen sollen nach Meinung der Bundesregierung der Entwicklung der strukturellen Benachteiligung von Frauen entgegenwirken?

Hierzu wird auf die übrigen Antworten zu Teil 2 dieser Anfrage verwiesen.

- 2.7 Beabsichtigt die Bundesregierung, die Mindestquotierung im Ausbildungs-, Erwerbs-, Fort- und Weiterbildungsbereich gesetzlich zu verankern, um die Diskriminierung von Frauen auf diesen Gebieten abzubauen?

Wenn nicht, welche Alternativen bietet die Bundesregierung?

Die Bundesregierung beabsichtigt keine gesetzliche Verankerung von Mindestquotierungen.

Das 10. AFG-Änderungsgesetz brachte eine Ergänzung des § 2 AFG, in der als Zielvorgabe eine ihrem Anteil an den Arbeitslosen entsprechende Beteiligung von Frauen an allen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vorgesehen ist.

- 2.8 Beabsichtigt die Bundesregierung, im Zusammenhang mit der steigenden Erwerbslosigkeit in der gesamt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gesetzliche Wochenarbeitszeit zu reduzieren und den gesetzlichen Urlaubsanspruch an den tarifvertraglich vereinbarten Anspruch von in der Regel 30 Tagen anzugleichen?

Die Bundesregierung beabsichtigt nicht, die Wochenarbeitszeit gesetzlich festzulegen.

Der bezahlte gesetzliche Mindesturlaub beträgt nach dem Bundesurlaubsgesetz für alle erwachsenen Ar-

beitnehmer 18 Werktag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20 Arbeitst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 gegenüber den derzeitigen tarifvertraglichen Urlaubsregelungen verhältnismäßig geringe Urlaubsdauer nach dem Bundesurlaubsgesetz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erklärt sich insbesondere daraus, daß der Gesetzgeber, um Eingriffe in die im Grundgesetz verankerte Tarifautonomie zu vermeiden, im Bundesurlaubsgesetz bewußt nur den Mindestanspruch auf bezahlten jährlichen Erholungsurlaub für die Arbeitnehmer geregelt hat.

Die Bundesregierung setzt sich nachdrücklich für eine Regelung über den bezahlten Mindesturlaub auf europäischer Ebene ein. Im Entwurf der Richtlinie des Rates über die Arbeitszeitgestaltung ist vorgesehen, die Dauer des bezahlten Mindesturlaubs auf vier Wochen festzuschreiben.

3. *Vereinbarkeit von Berufstätigkeit und Haus-, Erziehungs-, Versorgungs- sowie Pflegearbeit (unbezahlte, von Frauen geleistete Arbeit)*

- 3.1 Durch welche Maßnahmen will die Bundesregierung die bisherige Subventionierung der Nichtberufstätigkeit von verheirateten Frauen in Form des Ehegattensplittings abbauen, und wie hoch sind die jährlichen Kosten, die für diese Subventionen ausgegeben werden bzw. der Verlust durch nicht eingenommene Steuern?

Die Bundesregierung plant keinen derartigen Abbau.

Das Ehegattensplitting stellt – entgegen der Behauptung der Fragesteller – keine Subventionierung der Nichtberufstätigkeit von verheirateten Frauen dar. Es ist vielmehr, w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seinem Urteil vom 3. November 1982 (BVerfGE 61/319, Bundessteuerblatt 1982 II S. 717 [726]) festgestellt hat – unbeschadet der näheren Gestaltungsbefugnis des Gesetzgebers –, eine an dem Schutzgebot des Artikel 6 Abs. 1 GG und der wirtschaftlichen Leistungsfähigkeit von Ehepaaren (Artikel 3 Abs. 1 GG) orientierte sachgerechte Besteuerung und somit keine beliebig veränderbare Steuer-„Vergünstigung“. Wi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a.O. weiter ausgeführt hat, wird durch das Splitting-Verfahren sowohl die bei einer Zusammenveranlagung ohne Splitting gegebene verfassungswidrige Benachteiligung derjenigen Ehe vermieden, in der beide Partner berufstätig sind, als auch die bei einer getrennten Veranlagung drohende Gefahr der Benachteiligung der Hausfrauen- oder Hausmännerne ausgeschlossen.

Die Splittingwirkung wird bei dem derzeitigen Einkommensteuertarif rein rechnerisch auf etwa 31 Mrd. DM geschätzt. Sie ist das Ergebnis einer sachgerechten Besteuerung und kein „Verlust durch nicht eingenommene Steuern“.

- 3.2 Welche Maßnahmen erachtet die Bundesregierung für geboten, um die Mehrfachbelastungen, denen Frauen besonders bei Vollerwerbstätigkeit ausgesetzt sind, zu verringern?



Die Frage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für Frauen und Männer ist für die Bundesregierung eine zentrale gesellschaftspolitische Aufgabe. Die auf diesem Gebiet bestehenden Probleme sind in erster Linie nicht rechtlicher Art, sondern liegen vor allem im unternehmerischen und tarifpolitischen Gestaltungsbereich. Deshalb hat die Bundesregierung im Mai 1992 eine ständige Arbeitsgruppe mit den Tarifparteien eingerichtet, die sich mit allen im Zusammenhang mit dieser Thematik auftretenden Fragen beschäftigen und konkrete Lösungsvorschläge erarbeiten soll.

Ein wesentlicher Beitrag zu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ist durch die Erleichterung der Freistellung von der Arbeit bei schwerer Erkrankung eines Kindes im Fünften Buch Sozialgesetzbuch (SGB V) ab 1. Januar 1992 geschaffen worden.

Ein Anspruch auf Krankengeld für die Betreuung eines erkrankten Kindes besteht nunmehr bis zur Vollendung des 12. Lebensjahres der Kinder.

Darüber hinaus wurde der Anspruchszeitraum für jedes Kind auf längstens zehn Arbeitstage je Elternteil bzw. bei Alleinerziehenden auf zwanzig Arbeitstage in jedem Kalenderjahr erhöht. Insgesamt besteht der Anspruch für höchstens 25 bzw. 50 Arbeitstage.

Die Vereinbarkeit von Familien- und Berufstätigkeit wird außerdem erleichtert durch ein ausreichendes Angebot an Kinderbetreuungsmöglichkeiten. Dies ist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weitgehend gewährleistet. Für die unter dreijährigen sowie die sechs- bis zehnjährigen Kinder gilt insgesamt, daß das Platzangebot dem Bedarf entspricht. Die Bildungs-, Betreuungs- und Erziehungsangebote durch Kindergärten für die drei- bis sechsjährigen Kinder sind mit 95 % insgesamt flächendeckend – vgl. auch Antwort zu Frage A. 3.3.

Im Zusammenhang mit der Thematik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ist auch auf den von der Bundesregierung geplanten Wettbewerb „Der familienfreundliche Betrieb“ hinzuweisen. Mit diesem Wettbewerb sollen erstmalig bundesweit Betriebe, bei denen besonders familienfreundliche Gestaltungen oder Einrichtungen vorhanden sind, die die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erleichtern, ausgezeichnet werden. Zugleich sollen mit diesem Wettbewerb auch die Bundesländer zu ähnlichen Initiativen angeregt werden.

Hinzuweisen ist auch noch auf das von der Bundesregierung in Auftrag gegebene Forschungsprojekt „Vorstellungen für eine familienorientierte Arbeitswelt der Zukunft“, dessen Gesamtergebnisse Anfang 1993 vorgelegt werden sollen.

- 3.3 Wie beur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Notwendigkeit der Verankerung eines Rechtsanspruchs auf öffentliche Kinderbetreuungsmöglichkeiten für Kinder jeglichen Alters im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Im Rahmen des 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es vom 5. August 1992 (BGBl. I S. 1398) wurde für den Zeitraum ab 1. Januar 1996 der Rechtsanspruch auf einen Kindergartenplatz für jedes Kind im Alter von

drei Jahren bis zur Schulpflicht bundesrechtlich verankert.

- 3.4 Durch welche Maßnahmen will die Bundesregierung garantieren, daß den Erziehenden ein ausreichendes Angebot von Kinderbetreuungseinrichtungen unterschiedlicher Träger (z. B. konfessionelle, freie, kommunale) zur Verfügung steht, so daß eine wirkliche Wahlfreiheit gesichert ist?

Nach der Kompetenzordnung des Grundgesetzes ist die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Aufgabe der Länder und der kommunalen Gebietskörperschaften.

Nach § 79 Abs. 2 des Achten Buches Sozialgesetzbuch – Kinder und Jugendhilfe (SGB VIII) – vom 26. Juni 1990 (BGBl. I S. 1163, 1166) sollen die Träger der öffentlichen Jugendhilfe (Kreise, kreisfreie Städte) gewährleisten, daß die zur Erfüllung der Aufgaben nach diesem Buch erforderlichen und geeigneten Einrichtungen, Dienste und Veranstaltungen den verschiedenen Grundeinrichtungen der Erziehung entsprechend rechtzeitig und ausreichend zur Verfügung stehen.

Der Bundesminister für Frauen und Jugend hat die ihm in § 83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zugewiesene Anregungskompetenz genutzt und zusammen mit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Freien Wohlfahrts- und der Bundesvereinigung der kommunalen Spitzenverbände eine Arbeitshilfe für die Träger der öffentlichen und freien Jugendhilfe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vorgelegt. In dieser Arbeitshilfe sind auch Hinweise und Empfehlungen für den Aufbau vielfältiger Trägerstrukturen enthalten.

4. *Frauenförderungskonzept der Bundesregierung*  
4.1 Wie sieht das Frauenförderungskonzept der Bundesregierun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aus?

Die berufliche Förderung von Frauen in der Bundesverwaltung dient der Chancengleichheit von Frauen im Arbeitsleben,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und ist außerdem integraler Bestandteil einer zukunftsorientierten Personalentwicklung mit dem Ziel einer modernen und leistungsstarken Verwaltung. Wichtigstes Förderungsinstrument ist die Richtlinie zur beruflichen Förderung von Frauen in der Bundesverwaltung in der Fassung vom 15. Oktober 1990 (GMBl. 1990, S. 830). Der 2. Bericht über die Situation der Frauen in der Bundesverwaltung, der z. Z. erstellt wird, soll die Erfahrungen bei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dokumentieren.

Die Bundesregierung hat ferner in einem Bericht vom April 1991 zur Frage weiterer Maßnahmen der Frauenförderung in Beruf, Familie und anderen Bereichen die Rechtsfrage beantwortet, welche Förderungsinstrumente nicht mehr durch eine Richtlinie geregelt wer-

den können, sondern einer gesetzlichen Grundlage bedürfen (Drucksache 12/447).

Das Zweite Gleichberechtigungsgesetz, dessen Referentenentwurf das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nach grundsätzlicher Abstimmung mit den anderen Ressorts Mitte Januar 1993 an die Länder und Verbände versandt hat, enthält grundsätzliche Regelungen für den Bereich der Bundesverwaltung. Schwerpunkte sind die berufliche Förderung, verbesserter Zugang zu Aus- und Fortbildung, Berücksichtigung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für Männer und Frauen im Rahmen der beruflichen Entwicklung und des Aufstiegs. Hierzu zählt insbesondere das Angebot an Teilzeitarbeitsplätzen. Insgesamt soll über Frauenförderpläne eine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Situation von Frauen in der Bundesverwaltung herbeigeführt werden. Aber auch im personalvertretungsrechtlichen Bereich soll der Frauenförderung verstärkte Priorität eingeräumt werden. Ein wichtiges Element der verstärkten Frauenförderung in der Bundesverwaltung ist die Bestellung von Frauenbeauftragten mit Kompetenzen.

B. Soziale Lage der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 Lage erwerbstätiger Frauen

1.1 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Auffassung, daß eine Erwerbsquote von 91 Prozent für Frauen im Wirtschaft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cht realisierbar ist?

Wenn ja, welche Alternativen für die Sicherung einer eigenständigen ökonomischen Existenz von Frauen sieht die Bundesregierung?

Die außerordentlich hohe Erwerbsquote der Frauen in der ehemaligen DDR war teilweise die Folge der von sämtlichen Markteinflüssen abgeschirmten sozialistischen Planwirtschaft.

Die Rahmenbedingung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gewährleisten, daß Erwerbslosigkeit nicht ursächlich zu ökonomischer Existenzgefährdung führt.

Vor diesem Hintergrund gibt es für die Bundesregierung auch keine Festlegung auf eine „wünschenswerte“ oder „zu realisierende“ Erwerbsquote für Frauen. Die Erwerbsquote für Männer und Frauen hängt in erster Linie von der allgemeinen Wirtschafts- und Arbeitsmarktentwicklung ab. Die Hinterlassenschaft der DDR-Regierung verhindert eine rasche Konsolidierung auf dem Arbeitsmark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2 In welchem Umfang werden Frauen als Teilzeitarbeitskräfte beschäftigt

- gemessen an der Gesamtzahl der weiblichen Arbeitskräfte,
  - gemessen an der Anzahl der männlichen Teilzeitarbeitskräfte,
- aufgeschlüsselt für die Jahre 1990, 1991 und 1992?

Repräsentative Daten liegen der Bundesregierung nicht vor.

Nach der Berufstätigenerhebung 1990 übten Ende November 1990 knapp 690 000 Frauen (= 19,3 % der insgesamt beschäftigten Frauen) und 52 600 Männ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Teilzeitbeschäftigung aus.

Für März/April 1991 ergab eine Befragung unter Federführung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eine Teilzeitquote von nur noch 18 % der insgesamt beschäftigten Frauen. Von allen Teilzeitkräften waren zu diesem Zeitpunkt 88,3 % Frauen, 11,7 % Männer.

1.3 Wie hoch ist der Anteil der Frauen, die mit sogenannten flexiblen Arbeitsverträgen beschäftigt werden [Kapazitätsorientierte Arbeitszeiten (KAPOVAZ), Job-sharing, Arbeit auf Abruf, Zeitverträge u. a.], in den Jahren 1990, 1991 und 1992?

Welche Gefahren einer Benachteiligung für die so beschäftigten Frauen sieht die Bundesregierung, und wie will sie ihnen entgegenwirken?

Zu den verschiedenen Arten von flexiblen Arbeitsverträgen liegen der Bundesregierung keine statistischen Angaben vor.

Die Bundesregierung sieht in variablen Arbeitszeitformen sowohl für Frauen wie für Männer die Möglichkeit einer besseren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Erwerbstätigkeit. Im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sind das Gebot der Gleichbehandlung von Teilzeitbeschäftigten und Vollzeitbeschäftigten sowie Mindeststandards zur sozialverträglichen Ausgestaltung von variabler Arbeitszeit und Arbeitsplatzteilung verankert.

1.4 Was hält die Bundesregierung für unbedingt geboten bzw. sinnvoll, um Fehlentwicklungen bei der Flexibilisierung und Deregulierung von Arbeitsverhältnissen/-zeiten und einseitigen Belastungen der betroffenen Arbeitnehmerinnen zu begegnen?

Das Beschäftigungswachstum in den alten Bundesländern während der 80er Jahre zeigt nach Auffassung der Bundesregierung, daß die bestehende Arbeitsmarktordnung grundsätzlich flexibel genug ist, um ein beschäftigungswirksames Wirtschaftswachstum zu ermöglichen. Durch die Deregulierungsbeschlüsse der Bundesregierung vom 24. Juni 1992 werden die für Arbeitnehm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ültigen Schutzvorschriften nicht wesentlich eingeschränkt.

– Die Verlängerung der zulässigen Dauer der Überlassung einer Leiharbeiterin an denselben Entleiher von jetzt sechs auf neun Monate und der Wegfall von Einschränkungen bei der Kollegenhilfe belasten Arbeitnehmerinnen nicht. Diese Deregulierungsmaßnahmen schaffen oder erhalten zusätzlich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bei Verleihern.

– Zur Befristung von Arbeitsverträgen wird auf die Antwort zu den Fragen B 1.3 und B 1.5, zur Arbeitszeitregelung auf die Antwort zu Frage A 2.8 verwiesen.

- 1.5 Wie will die Bundesregierung der Gefahr begegnen, daß die Arbeitsplatzsicherung bzw. der Kündigungsschutz während der Zeiten von Mutterschutz und Elternurlaub durch den Abschluß von befristeten Arbeitsverträgen unterlaufen werden?

Die Arbeitsplatzsicherung und der besondere Kündigungsschutz während der Zeiten des Mutterschutzes und des Erziehungsurlaubs werden durch den Abschluß befristeter Arbeitsverträge nicht unterlaufen. Auch während der Dauer eines befristeten Arbeitsverhältnisses gelten die besonderen Kündigungsverbote des Mutterschutzgesetzes und des Bundeserziehungsgeldgesetzes. Lediglich wenn ein solches Arbeitsverhältnis durch Fristablauf endet, finden die Kündigungsverbote mangels Vorliegens einer Kündigung keine Anwendung.

Im übrigen geht aus einer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im Zeitraum 1987/88 durchgeführten Untersuchung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nach dem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hervor, daß Frauen im Alter zwischen 20 und 34 Jahren (zu dieser Altersgruppe dürfte die überwiegende Zahl von Arbeitnehmerinnen mit Ansprüchen nach dem Mutterschutzgesetz und nach dem Bundeserziehungsgeldgesetz gehören) bei den befristet beschäftigten Arbeitnehmern in geringerem Umfang repräsentiert sind als bei der Vergleichsgruppe der unbefristet Beschäftigt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festgestellt, daß auch befristete Arbeitsverträge nach dem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nicht zu einer Umgehung des besonderen Kündigungsschutzes junger Mütter und Erziehender beigetragen haben (Forschungsbericht Nr. 183 „Befristete Arbeitsverträge nach dem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Juni 1989).

- 1.6 Welche Entlohnungsunterschiede existieren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aufgeschlüsselt nach den Jahren 1990, 1991 und 1992?

Seit 1972 gibt es in den Tarifverträgen keine spezifischen Frauenlohngruppen mehr, die bei gleicher oder gleichwertiger Arbeit für die Frauen einen niedrigeren Lohn als für die Männer vorsehen. Insoweit kann der Grundsatz der Lohngleichheit in den Tarifverträgen als verwirklicht angesehen werden.

Unterschiedliche Durchschnittsverdienste für Frauen und Männer können verschiedene Gründe haben. Repräsentative Angaben in der gefragten Aufschlüsselung liegen der Bundesregierung nicht vor.

- 1.7 Hält die Bundesregierung das bestehende Angebot an Kinderbetreuungseinrichtungen für bedarfsdeckend, sind die Öffnungszeiten bedarfsgerecht und mit den Erwerbsarbeitszeiten vereinbar?

Wenn nicht, welche Maßnahmen schlägt die Bundesregierung vor?

Vergleiche Antwort zu Frage B 1.8.

- 1.8 Welche Verbesserungen des Angebots an Kinderbetreuungseinrichtungen, vor allem beim Angebot von Kinderkrippen, Ganztagskindergärten und Horten sind auch vor dem Hintergrund der vom Deutschen Bundestag beschlossenen Neuregelung des § 218 StGB für die nächste Zeit von der Bundesregierung geplant?

Die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 ist nach der Kompetenzordnung des Grundgesetzes Aufgabe der Länder und kommunalen Gebietskörperschaften.

## 2. Lage erwerbsloser Frauen

- 2.1 Welche Bedingungen hat die Bundesregierung geschaffen, damit die Lösung des Problems der „Überbeschäftigung“ von Frauen in der DDR nicht zuungunsten der berufstätige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folgt?

Hinter dem Begriff „Überbeschäftigung“ verbirgt sich die hohe verdeckte Arbeitslosigkeit in der ehemaligen DDR, die sowohl Arbeitnehmerinnen als auch Arbeitnehmer betraf. Die Bundesregierung ist bemüht, die Folgen der sozialistischen Mißwirtschaft durch eine Vielzahl wirtschafts- und finanzpolitischer Maßnahmen zu beseitigen, den wirtschaftlichen Umstrukturierungsprozeß in den neuen Ländern durch öffentliche Investitionen zu erleichtern sowie insbesondere die für die erforderliche Investitionstätigkeit der Wirtschaft notwendigen Rahmenbedingungen zu setzen.

- 2.2 Wie viele der im Jahr 1989 in der Volkswirtschaft der DDR erwerbstätigen Frauen (ständige Berufstätige) hatten per 31. Dezember 1990 und per 31. Dezember 1991 noch einen Erwerbsarbeitsplatz entsprechend ihrer Qualifikation, und wie viele haben ihn heute noch?

Zuverlässige Daten über die qualifikationsgemäße Beschäftigung von Frauen stehen der Bundesregierung nicht zur Verfügung. Angaben, die auf der subjektiven Einschätzung der Befragten beruhen, können dem Arbeitsmarkt-Monitor entnommen werden.

- 2.3 In welcher Situation befinden sich die seit 1989 entlassenen Frauen, wie viele
- haben eine andere Erwerbsmöglichkeit gefunden,
  - sind in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einbezogen,

- befinden sich in einer Umschulung,
- sind in Vorruhestand bzw. Altersübergang gegangen,
- sind berentet worden,
- sind erwerbslos?

Wie viele der im November 1991 erwerbstätigen 7,3 Mio. Personen (Frauen 3,2 Mio.) seit September 1989 zwischenzeitlich einmal ihren Arbeitsplatz verloren hatten, bzw. wie viele der seit 1989 bis jetzt freigesetzten erwerbstätigen Frauen eine andere Erwerbstätigkeit gefunden haben, kann den verfügbaren Daten nicht entnommen werden. Untersuchungen des IAB (Arbeitsmarktmonitor) zeigen lediglich, daß von den seit 1989 entlassenen Personen viele einen ein- oder mehrmaligen Statuswechsel vollzogen haben.

In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befanden sich zum November 1991 371 000 Beschäftigte (davon 134 000 Frauen). Im Dezember 1992 waren es 359 000 Personen (davon 158 450 Frauen).

Bestandszahlen zu den Teilnehmern an v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geförderte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liegen nach Geschlechtern getrennt noch nicht vor.

Von der Möglichkeit des Vorruhestandes nach der Vorruhestandsgeldverordnung der ehemaligen DDR vom 8. Februar 1990 haben ca. 400 000 Personen Gebrauch gemacht (Anteil der Frauen nach Schätzungen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ca. 55 %).

Altersübergangsgeld bezogen im Juni 1991 37 000 Frauen, im Dezember 1991 86 000 Frauen und im Dezember 1992 mehr als 180 500 Frauen.

Arbeitslos gemeldet war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Juni 1991 842 500 Personen (Frauen 482 000), im Dezember 1991 1,0 Mio. Personen (Frauen rd. 635 000). Im Dezember 1992 waren 1,100 Mio. Arbeitslose gemeldet, darunter 703 500 Frauen.

Über die Zahl der seit 1989 entlassenen Frauen, die inzwischen eine Altersrente erhalten, liegen der Bundesregierung keine Angaben vor.

- 2.4 Wie viele Frauen erhalten Arbeitslosengeld, wie viele Frauen erhalten Arbeitslosenhilfe, und wie viele Frauen erhalten Sozialhilfe als Ergänzung zum Arbeitslosengeld bzw. nach Auslaufen des Arbeitslosengeldes, aufgeschlüsselt nach Ländern und Altersstruktur für die Jahre 1990, 1991 und 1992?

Wie hoch ist der Anteil der Frauen, die eine dieser Lohnersatzleistungen erhalten, gemessen an der Gesamtzahl der erwerbslosen Frauen?

Die verfügbaren Daten – wobei eine Gliederung nach der Altersstruktur nicht möglich ist – ergeben sich aus den folgenden Aufstellungen:

Juni 1991	Arbeitslose Frauen	darunter Alg-Empfänger		darunter Alhi-Empfänger	
		absolut	in %	absolut	in %
Mecklenburg-Vorpommern	65 384	48 905	74,8	798	1,2
Brandenburg	72 088	54 850	76,1	889	1,2
Berlin (Ostteil)	42 020	28 314	67,4	588	1,4
Sachsen-Anhalt	88 208	65 480	74,2	1 204	1,4
Sachsen	130 476	106 334	81,5	1 361	1,0
Thüringen	84 216	68 302	81,1	715	0,8
<b>Bundesgebiet (Ost)</b>	<b>482 392</b>	<b>372 185</b>	<b>77,2</b>	<b>5 555</b>	<b>1,2</b>

Dezember 1991	Arbeitslose Frauen	darunter Alg-Empfänger		darunter Alhi-Empfänger	
		absolut	in %	absolut	in %
Mecklenburg-Vorpommern	79 145	54 911	69,4	5 777	7,3
Brandenburg	96 607	69 178	71,6	5 905	6,1
Berlin (Ostteil)	52 576	31 763	60,4	2 309	4,4
Sachsen-Anhalt	120 342	85 267	70,9	6 828	5,7
Sachsen	178 005	134 147	75,4	9 169	5,2
Thüringen	108 035	83 389	77,2	5 157	4,8
<b>Bundesgebiet (Ost)</b>	<b>634 710</b>	<b>458 655</b>	<b>72,3</b>	<b>35 145</b>	<b>5,5</b>

Juni 1992	Arbeitslose Frauen	darunter Alg-Empfänger absolut	darunter Alg-Empfänger in %	darunter Alhi-Empfänger absolut	darunter Alhi-Empfänger in %
Mecklenburg-Vorpommern	92 404	69 462	75,2	10 253	11,1
Brandenburg	110 256	84 328	76,5	10 615	9,6
Berlin (Ostteil)	52 053	33 697	64,7	4 088	7,9
Sachsen-Anhalt	137 855	103 824	75,3	11 515	8,4
Sachsen	201 160	157 037	78,1	16 333	8,1
Thüringen	121 146	98 227	81,1	9 733	8,0
Bundesgebiet (Ost)	714 874	546 575	76,5	62 537	8,7

- 2.5 Wie viele Frauen erhalten kein(e) Arbeitslosengeld/Arbeitslosenhilfe, weil sie aus verschiedenen Gründen „dem Arbeitsmarkt nicht mehr zur Verfügung stehen“, oder „nicht bedürftig“ sind?

Personen, die dem Arbeitsmarkt nicht zur Verfügung stehen, werden in den Statistik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icht erfaßt.

Fehlende Bedürftigkeit schließt nur den Anspruch auf Arbeitslosenhilfe aus, Arbeitslosenhilfe wurde wegen mangelnder Bedürftigkeit im ersten Halbjahr 1992 in 36 121 Fäll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in 9 947 Fä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bgelehnt. Frauen wurden dabei statistisch nicht gesondert erfaßt.

- 2.6 Welche Probleme erschweren aus der Sicht der Bundesregierung die Wiedereingliederung von Frauen, und durch welche Maßnahmen will die Bundesregierung diese Schwierigkeiten überwinden helfen?

Für Frauen, die arbeitslos geworden sind oder ihre Berufstätigkeit aus familiären Gründen unterbrochen haben, ist es schwerer als für Männer, wieder einen Arbeitsplatz zu bekommen. Dies gilt besonders in Zeiten einer insgesamt schwierigen Arbeitsmarktsituation. Besonders schwer haben es dabei ältere und alleinstehende Frauen.

Insgesamt sind folgende Probleme zu beobachten:

- Familienbedingte Flexibilitäts- und Mobilitätseinschränkungen von Frauen mindern ihre Chancen auf ein neu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In ihrer Mobilität eingeschränkt sind insbesondere Frauen in ländlichen Regionen.
- Das Angebot an Teilzeitarbeitsplätzen ist zu gering. Insbesondere Frauen suchen aufgrund ihrer familiären Aufgaben und Verpflichtungen häufig um Teilzeitarbeit nach.
- Bei Neueinstellungen ist der Anteil der Männer deutlich höher als der Anteil der Frauen. Obwohl das Ausbildungsniveau der Frauen in den neuen Ländern vergleichsweise hoch ist (90 % haben eine Berufsausbildung, ein nicht geringer Teil verfügt über 2 Facharbeiterabschlüsse), werden Frauen gerade im gewerblich-technischen Bereich nur selten von den Arbeitgebern berücksichtigt.

– Vielfach entwerfen sich zunächst vorhandene Qualifikationen von Frauen durch längere Erwerbslosigkeit; Qualifikationsdefizite wirken sich hinwiederum bei Frauen weitaus stärker aus als bei Männern.

– Wirtschaftsbereiche mit zur Z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tendenziell steigender Arbeitskräftenachfrage, wie z. B. der Baubereich, stellen kaum Frauen ein. Zudem verdrängen zunehmend Männer die Frauen aus ehemals weiblich dominierten Beschäftigungsbereichen, wie z. B. Banken, Sparkassen.

Bei der Überwindung dieser Schwierigkeiten werden die bereits in Frage A 2.2 – 2.4 genannten Maßnahmen helfen.

Große Bedeutung bei der Wiedereingliederung von arbeitslosen Frauen haben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Für deren massiven Einsa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hat die Bundesregierung im Zusammenwirken mi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chon frühzeitig die Weichen gestellt. Der Frauenanteil an diesen von der Bundesanstalt geförderten Maßnahmen ist daher bereits jetzt sehr hoch (Anteil an den Gesamteintritten im Verlauf des Jahres 1992: 62,0 %). Wichtig sind dabei neben einer weiteren Anhebung des Qualifikationsniveaus eine Erweiterung des Berufsspektrums sowie frauenfreundliche Weiterbildungsangebote, die von Frauen auch während der Familienphase wahrgenommen werden könnten.

Einige im 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 vom 5. August 1992 (BGBl. I S. 1397) enthaltenen Änderung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bewirken eine wesentliche Verbesserung der Situation von Berufsrückkehrerinnen: Die Befristung bei § 44 („Unterhaltsgeld“) für Ansprüche auf Teilzeitunterricht ist entfallen; die Übernahme der Kinderbetreuungskosten bei der Teilnahme an Fortbildungsmaßnahmen ist deutlich auf 120 DM pro Kind erhöht worden (§ 45, S. 2); ferner ist für Berufsrückkehrerinnen ein Rechtsanspruch auf einen Einarbeitungszuschuß begründet worden (§ 49 AFG). Arbeitslose Berufsrückkehrerinnen können nach einer längeren Familienphase nach wie vor einen Einarbeitungszuschuß bis zur Höhe von 50 % erhalten.

Zunehmende Bedeutung bei der Wiedereingliederung von arbeitslosen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erden die beiden Sonderprogramme zur Bekämpfung der Langzeitarbeitslosigkeit erlangen, die die Bundesregierung in Ergänzung des AFG-Instrumen-

tariums aufgelegt und bereits mehrfach verlängert sowie auf insgesamt 3,33 Mrd. DM aufgestockt hat.

Darüber hinaus sind im Rahmen eines auf zunächst drei Jahre befristeten Modellversuch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Fürstentwalde (Brandenburg), Teterow (Mecklenburg-Vorpommern), Dresden (Sachsen), Dessau (Sachsen-Anhalt) und Roßleben (Thüringen) Modellberatungsstellen für Frauen eingerichtet mit dem Ziel, angesichts des gesellschaftlichen Umbruchs und der wirtschaftlichen Umstrukturierung Orientierung, Beratung und Unterstützung für Frauen anzubieten.

Letztlich hängt die Wiedereingliederung der derzeit hohen Zahl von arbeitslosen Frauen vor allem davon ab, wie schnell der Beschäftigungsaufbau in den neuen Ländern gelingt. Zusätzlich sind die Arbeitgeber gefordert, stärker als bisher Nachteile der Frauen bei der Arbeitsplatzvergabe abzubauen und sie vermehrt bei Neueinstellungen zu berücksichtigen.

### 3. Lage der Vorruehst ndlerinnen in den neuen Bundesl ndern

- 3.1 Wie hat sich der Anteil der Vorruehst ndlerinnen und Bezieherinnen von Alters bergangsgeld in den Jahren 1990 bis 1992 gemessen an der Gesamtzahl der Menschen im Vorruehstand bzw. in Alters bergang entwickelt?

Der Anteil der Bezieherinnen von Vorruehstandsgeld betr gt nach Sch tzungen des IAB zum 31. Dezember 1992 nahezu unver ndert rd. 55 %.

Angaben  ber die Zahl von Frauen, die Alters bergangsgeld beziehen, liegen f r die Zeit ab Mitte 1991 vor. Im Juni 1991 lag der Frauenanteil beim Alters bergangsgeld bei 25,8 %, im Dezember 1991 bei 26,2 %, Ende 1992 bei 31 %.

Der relativ geringe Anteil von Frauen an der Gesamtzahl der Alters bergangsgeldempf nger resultiert daraus, da  Frauen nach der bis zum 2. Oktober 1990 geltenden Vorruehstandsverordnung der ehemaligen DDR bereits ab vollendetem 55. Lebensjahr, M nner dagegen erst mit vollendetem 60. Lebensjahr Vorruehstandsgeld beanspruchen konnten. Hinzu kommt, da  nach dem bis zum 31. Dezember 1991 geltenden Rentenrecht der ehemaligen DDR und auch nach dem am 1. Januar 1992 in Kraft getretenen SGB VI Frauen, die das 60. Lebensjahr vollendet haben, regelm  ig die Voraussetzungen f r die Zuerkennung einer Altersrente erf llen.

- 3.2 Wie hoch sind die Durchschnittsbezug  der Vorruehst ndlerinnen und Bezieherinnen von Alters bergangsgeld gemessen an den Durchschnittsbezug  der entsprechenden m nnlichen Betroffenenengruppe?

Der Bundesregierung liegen keine Angaben  ber die durchschnittliche H he des Vorruehstandsgeldes – getrennt nach M nnern und Frauen – vor.

Der durchschnittliche w chentliche Leistungssatz f r Bezieherinnen von Alters bergangsgeld betr gt 200,58 DM (Stand 31. Juli 1992). Dies entspricht 75,94 % des durchschnittlichen Leistungssatzes der m nnlichen Bezieher, der bei 264,12 DM pro Woche liegt.

- 3.3 Wie hoch ist der Anteil der Vorruehst ndlerinnen und Bezieherinnen von Alters bergangsgeld, die Sozialhilfe beziehen,

- absolut,
- prozentual, gemessen an der Anzahl derer, die wegen Niedrigsteinkommen Sozialhilfe beziehen k nnten?

Wie hoch w ren nach den Berechnungen der Bundesregierung die Aufwendungen f r Sozialhilfe f r diese Betroffenenengruppe?

Daten  ber den Anteil der Bezieherinnen von Vorruehstandsgeld bzw. Alters bergangsgeld, die Sozialhilfe erhalten bzw. wegen Niedrigsteinkommen erhalten k nnten, liegen nicht vor.

- 3.4 Welche Ma nahmen erw gt die Bundesregierung, um zu verhindern, da  auf eine ganze Frauengeneration – die  ber 50j hrigen – Druck ausge bt wird, sich aus dem Erwerbsleben in den Vorruehstand bzw. Alters bergang zu verabschieden?

Gibt es  berlegungen der Bundesregierung, die rechtlichen M glichkeiten daf r zu schaffen, Entscheidungen f r Vorruehstand und Alters bergang r ckg ngig zu machen?

Die derzeitige Wirtschafts- und Arbeitsmarkt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ndern, die – insbesondere f r Frauen – mit hoher Arbeitslosigkeit verbunden ist, ist eine unmittelbare Folge der Mi wirtschaft der ehemaligen DDR. Ziel der Politik der Bundesregierung ist die Schaffung neuer, wettbewerbsf higer und damit zukunftstr chtiger Arbeitspl tze. Vorruehstands- und Alters bergangsregelungen tragen f r eine  bergangszeit zur notwendigen Entlastung des Arbeitsmarktes bei.

Bezieher von Vorruehstands- oder Alters bergangsgeld sind nicht daran gehindert, wieder eine Besch ftigung aufzunehmen. Bei einer w chentlichen Arbeitszeit von 18 Stunden oder mehr entf llt jedoch der Leistungsanspruch.

- 3.5 Wie hoch sind nach den Berechnungen der Bundesregierung die sp teren Durchschnittsrenten von Vorruehst ndlerinnen und Bezieherinnen von Alters bergangsgeld, auch gemessen an den Durchschnittsrenten der entsprechenden m nnlichen Betroffenenengruppen?

Eine Berechnung der k nftigen Altersrenten von Vorruehst ndlerinnen und Bezieherinnen von Alters bergangsgeld ist derzeit nicht m glich, da weder Daten zum Versicherungsverlauf noch zu den aus ver-

sicherungspflichtiger Tätigkeit erzielten Entgelten für diese Personengruppe vorliegen.

- 3.6 Welche Überlegungen gibt es bei der Bundesregierung, die Grenzen für wöchentliche Nebeneinkünfte für Vorruehändlerinnen und Bezieherinnen von Altersübergangsgeld zu erhöhen?

Keine.

4. *Soziale Sicherung nicht erwerbstätiger Frauen*
- 4.1 In welchem Ausmaß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haben nicht erwerbstätige Frauen eigenständige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 Ansprüche, und in welchem Ausmaß sind Ansprüche von der Erwerbstätigkeit des Ehemannes abhängig?

I. Eigenständige Ansprüche von nicht erwerbstätigen Frauen in der Rentenversicherung:

1. Hinterbliebenenrenten- und Erziehungszeiten-Gesetz

Ab 1. Januar 1986 erfolgte die Einführ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pro Kind ein Kindererziehungsjahr) für Mütter der Geburtsjahrgänge ab 1921.

Durch das Renten-Überleitungsgesetz wurde diese Begünst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b 1. Januar 1992 für Mütter der Jahrgänge ab 1927 eingeführt.

2. Kindererziehungsleistungs-Gesetz

Die Einbeziehung der Mütter der Geburtsjahre vor 1921 in eine Kindererziehungsregelung erfolgte in vier Stufen, beginnend ab 1. Oktober 1987. Seit dem 1. Oktober 1990 werden alle Mütter der Jahrgänge vor 1921 begünstigt.

Durch das Renten-Überleitungsgesetz wurde diese Begünstigung,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b 1. Januar 1992 für Mütter der Jahrgänge vor 1927, die keine Versicherungsrente beziehen, eingeführt.

3. Maßnahmen im Rentenreformgesetz 1992

- Anrechnung von drei Jahren für die Erziehung eines Kindes bei Geburten ab 1992;
- Einführung von Kinder-Berücksichtigungszeiten und von Pflegeberücksichtigungszeiten;
- Ausweitung der Rente nach Mindesteinkommen (Anhebungsmöglichkeit auch der Zeiten zwischen 1973 und 1991);
- Wegfall der Halbbelegung als Anrechnungsvoraussetzung für beitragsfreie Zeiten.

II. Abgeleitete Ansprüche von nicht erwerbstätigen Frau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ie Hinterbliebenenversorgung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wurde durch das Hinterbliebenenrenten- und Erziehungszeiten-Gesetz, das die Witwen-/Witwerrente mit Einkommensanrechnung ab 1. Januar 1986 einführt, neu geregelt.

Diese Regelung wurde durch das Renten-Überleitungsgesetz ab 1. Januar 1992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übernommen. Danach erhalten Frauen und Männer nach dem Tod des versicherten Ehegatten bei Erfüllung der versicherungsrechtlichen Voraussetzungen, d. h. bei Erfüllung der Wartezeit von 60 Monaten, eine Witwenrente/Witwerrente. Sie beträgt 60 % der Versichertenrente des Verstorbenen, wenn der bzw. die Hinterbliebene das 45. Lebensjahr vollendet hat, ein Kind erzieht, das das 18.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t, oder berufs- oder erwerbsunfähig ist (große Witwenrente/Witwerrente). Die übrigen Witwen/Witwer haben Anspruch auf die kleine Witwenrente/Witwerrente, die 25 % der Versichertenrente des Verstorbenen beträgt. Allerdings wird bei der Festsetzung der Höhe der Hinterbliebenenrente ein Teil des Einkommens des überlebenden Ehegatten berücksichtigt.

Die neuen Regelungen, die nicht nur für Todesfälle vom 1. Januar 1992 an, sondern auch für früher eingetretene Todesfälle gelten, führen insbesondere zur Verbesserung der sozialen Situation der Witwen, die die besonderen Voraussetzungen des Rentenrechts der ehemaligen DDR für einen Anspruch auf Witwenrente nicht erfüllten. Etwa 150 000 Witwen werden hierdurch erstmalig einen Witwenrentenanspruch erlangen. Deutlich verbessert wurde aber auch die Situation der Witwen, die zwar eine Witwenrente erzielten, deren Rente jedoch aufgrund der strengen Zusammentreffensregelungen der ehemaligen DDR auf ein Viertel (also 15 %) der Rente des verstorbenen Mannes reduziert war. Hierbei handelt es sich um rd. 700 000 Witwen, deren Rente sich im Durchschnitt um 290 DM monatlich erhöht hat.

- 4.2 Wie hoch ist die durchschnittliche Lebensarbeitszeit (Jahre der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im Vergleich zu Männern
-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tatistische Daten zu einer durchschnittlichen Lebensarbeitszeit (Jahre der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und Männern liegen nicht vor.

Da diese Frage im Kontext mit anderen Fragen zur rentenrechtlichen Absicherung von Frauen gestellt wurde, werden im folgenden die Zeiten ausgewiesen, die den eigenständigen Ansprüchen in der Rentenversicherung zugrunde liegen. Grundlage für einen Rentenanspruch sind jedoch nicht die Jahre der Erwerbstätigkeit, sondern Jahre der versicherungspflichtigen Tätigkeit sowie Ausbildungszeiten, Zeiten für Kindererziehung und weitere Ersatz- und Anrechnungszeiten.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werden hier die den Altersrenten im Rentenbestand am 1. Januar 1992 im Durchschnitt zugrundeliegenden Versicherungsjahre ausgewiesen:

Männer 39,7 Jahre,  
Frauen 23,8 Jahre.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liegen für den 1. Januar 1992 nur die durchschnittlichen Versicherungsjahre für die umgewerteten Versichertenrenten (einschließlich Frührenten) für Rentner ohne ehemalige Zusatzversicherungen vor:

Männer 45,1 Jahre,  
Frauen 30,4 Jahre (ohne Zeiten für Kindererziehung).

- 4.3 Wie viele Frauen (prozentualer Anteil an der Gesamtzahl der Frauen im Rentenalter) haben einen eigenständigen Rentenanspruch, und wie viele haben einen abgeleiteten Rentenanspruch bzw. beziehen eine Witwenrente

-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ie hoch sind die eigenständigen Rentenansprüche der Frauen gegenüber denen der Männer

-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ährend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Frauen nur unter einschränkenden Voraussetzungen ab dem 60. Lebensjahr Altersrenten in Anspruch nehmen können, begann für die Frauen in der ehemaligen DDR die Regelaltersrente bereits mit dem 60. Lebensjahr. Daher wird als Beginn des Rentenalters jeweils das Alter für den Bezug der Regelaltersrente angenommen: für die Frau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as 65. Lebensjahr und für die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as 60. Lebensjahr.

Am 1. Januar 1991 war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rd. 6,4 Mio. Frauen 65 Jahre und älter. Davon bezogen rd. 73 % Renten aus eigener Versicherung und rd. 52 % Witwenrenten. Statistiken, inwieweit neben einer Rente aus eigener Versicherung gleichzeitig eine Witwenrente bezogen wird, liegen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nicht vor. Betrachtet man nur die relativ jüngeren Jahrgänge im Alter 66/67, so lag hier der Anteil der Frauen mit Renten aus eigener Versicherung zum gleichen Zeitpunkt mit rd. 90 % bereits wesentlich höher. Dazu sind noch die Frauen zu berücksichtigen, die Beamtenpensionen oder Leistungen anderer Altersversicherungssysteme bezo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aren am 1. Januar 1991 rd. 2,0 Mio. Frauen 60 Jahre und älter. Am 1. Juli 1991 bezogen gut 97 % der Frauen im Rentenalter eine Rente aus eigener Versicherung und rd. 45 % Witwenrenten. Insgesamt bezogen knapp 54 % der Frauen im Rentenalter nur eine Rente aus eigener Versicherung. Knapp 44 % der Frauen im Rentenalter bezogen sowohl eine Rente aus eigener Versicherung als auch eine Witwenrente. Nur knapp 2 % der Frauen im Ren-

tenalter erhielten nur eine Witwenrente ohne eigenen Rentenanspruch. Hier wurden die Frauen nicht erfaßt, die Leistungen der Sonderversorgungssysteme der ehemaligen DDR bezo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rhielten Versichertenrentnerinnen am 1. Juli 1992 eine durchschnittliche Versichertenrente von netto 728 DM. Die Versichertenrentner bezogen dagegen eine durchschnittliche Nettoversichertenrente von 1 691 D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zogen die Versichertenrentnerinnen am 1. Juli 1992 durchschnittlich 826 DM netto, während die Versichertenrentner eine durchschnittliche Versichertenrente von netto 1 242 DM erhielten (ggf. einschließlich Auffüllbeträge).

- 4.4 In welchem Umfang erhalten Frauen zusätzlich zur Rente Sozialzuschläge, weil die Höhe der eigenständigen oder abgeleiteten Renten unter dem Sozialhilfesatz liegen,
-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zialzuschläge werden nur zu den Ren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zahlt.

Eine aktuelle Auswertung der Sozialzuschläge nach Geschlecht liegt nicht vor. Wenn man die Struktur der vorläufigen Ergebnisse der Rentenbestandstatistik vom Juli 1992, die auch nach Geschlecht gegliedert sein wird, hochrechnet auf aktuelle statistische Ergebnisse zum Sozialzuschlag, ergibt sich folgendes Bild:

Von den im Dezember 1992 gezahlten rd. 140 000 Sozialzuschlägen gingen etwa 122 000 an Frauen. Von den Versichertenrentnerinnen erhielten etwa 110 000 oder 5,4 % einen Sozialzuschlag. In etwa 12 000 Fällen wurde zu einer Witwenrente ein Sozialzuschlag gezahlt (in 1,3 % der Fälle).

- 4.5 Welche Maßnahmen hält die Bundesregierung für geboten, um die durch Ausfallzeiten wegen der Betreuung von Kindern und pflegebedürftigen Familienangehörigen entstehende Benachteiligung von Frauen bei der Rentenberechnung auszugleichen?

Die bisherige schrittweise Vorgehensweise von Bundesregierung und Gesetzgeber bei der Anerkenn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im Rentenrecht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n seinem Urteil vom 7. Juli 1992 voll bestätigt. Das Gericht hat festgestellt, daß der Gesetzgeber angesichts der für das System der Altersversorgung bestandssichernden Bedeutung der Kindererziehung verpflichtet ist, die Berücksichtigung von Kindererziehungszeiten im Rentenrecht schrittweise weiter auszubauen. Der Gesetzgeber hat danach sicherzustellen, daß sich mit jedem Reformschritt die Benachteiligung der kindererziehenden Familienmitglieder gegenüber Kinderlosen in der Alterssicherung tatsächlich verringert. Vorgaben zu Zeitpunkt und Umfang einzelner Reformschritte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nicht gemacht.



Die Bundesregierung wird diesen Auftra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ihrer künftigen Rentenpolitik beachten.

Pflegezeiten finden ab 1. Januar 1992 eine rentenrechtliche Anerkennung als Berücksichtigungszeiten. Nach der Konzeption der Koalition zur Einführung einer Pflegeversicherung sollen sie ab 1. Januar 1996 auf der Basis einer aktuellen Beitragszahlung zu Beitragszeiten aufgewertet werden.

#### 5. Soziale Sicherung von Ausländerinnen

- 5.1 Wie viele Ausländerinnen haben ein eigenständiges Bleibe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welchem Prozentsatz an der Gesamtzahl 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lebenden Ausländerinnen entspricht das?

Der Bundesregierung liegen hierüber keine detaillierten Erkenntnisse vor.

- 5.2 Wie viele Ausländerinnen sind erwerbstätig, wie viele erhalten Lohnersatzleistungen bzw. Sozialhilfe als Zuschlag zu Lohnersatzleistungen oder nach deren Auslaufen?

Im April 1991 gab 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rd. 23 000 erwerbstätige Ausländerinnen.

Gesonderte Angaben über die Zahl der ausländischen Empfängerinnen von Lohnersatzleistungen sowie über den Bezug von Sozialhilfe als Ergänzung oder im Anschluß an Leistung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liegen nicht vor.

- 5.3 Wie schätzt die Bundesregierung die Situation älterer Ausländerinnen ein?

Grundsätzlich unterliegt die Lebenssituation älterer Ausländer und Ausländerinnen denselben Faktoren wie die älterer Bundesbürger. Hierzu kommen Aspekte wie Herkunft aus anderen Kulturkreisen, Aufenthaltsrechtlicher Status, Sprachkenntnisse usw.

#### C. Die gesellschaftliche Teilhabe von Frauen

1. Welche Erkenntnisse liegen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Teilhabe von Frauen an Führungspositionen in
- Politik,
  - Wirtschaft,
  - sonstigen Institutionen
- in den alten u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or?

– In den 12. Deutschen Bundestag wurden 136 weibliche Abgeordnete (20,5 %) gewählt. Diese Zahl hat sich inzwischen durch Nachrücken für ausschei-

dende Abgeordnete auf 140 erhöht (Stand: 1. April 1992).

Der Anteil der Frauen in den Landesparlamenten schwankt zwischen 11,0 % und 34,8 %.

In den gewählten Vertretungen der Städte und Gemeinden stieg der Frauenanteil in den letzten Jahren ständig. 1992 lag er in den Gemeinden mit mehr als 10 000 Einwohnern bei durchschnittlich 20,1 % (1983: 10,8 %), in den Großstädten mit über 100 000 Einwohnern bei 26,7 %. Einen Frauenanteil von 40 % und mehr erreichten die Städte Freiburg i. Br. (41,7 %), Potsdam (40,9 %), Mainz (40,7 %), München und Nürnberg (40,0 %). Nur in 5 der insgesamt 83 Großstädte lag der Frauenanteil unter 15 %.

Die Zahl der weiblichen Mitglieder in den politischen Parteien ist zwar in den letzten Jahren kontinuierlich gestiegen, ihr Anteil bei den Funktionsträgern liegt aber fast überall noch deutlich unter ihrem Anteil an der Mitgliederzahl.

- Nach dem Mikrozensus waren im April 1991 in den alten Bundesländern 846 000 (= 7,06 %) aller weiblichen Erwerbstätigen als Führungskräfte (Selbständige und abhängig Beschäftigte mit gehobener Stellung wie Abteilungsleiter, Prokurist, Direktor, Amtsleiter und Betriebsleiter) täti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aren dies 197 000 (5,46 %).
- An den Hochschulen der neuen Länder stellen die Frauen gut ein Drittel des wissenschaftlichen Personals; der entsprechende Anteil in den alten Ländern lag im Jahr 1990/91 bei 23 % (vgl. im einzelnen Antwort zu Frage A 1.9). Auch bei den Hochschullehrern liegt der Frauenanteil in den neuen Ländern mit 9 % über dem in den alten Ländern mit 5 %.
- Aus dem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Berufung von Frauen in Gremien, Ämter und Funktionen, auf deren Besetzung die Bundesregierung Einfluß hat (Gremienbericht vom 21. Mai 1991, Drucksache 12/594), geht hervor, daß in den untersuchten mehr als 1 000 Gremien und Ämtern insgesamt 5,2 % Frauen vertreten sind (siehe wegen weiterer Initiativen auch die Antwort zu Frage C 3).

2. In welchem Ausmaß sind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eit 1990 aus derartigen Führungsgremien herausgedrängt und durch Männer ersetzt worden?

Der Bundesregierung liegen keine Erkenntnisse darüber vor, daß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eit 1990 Frauen aus Führungsgremien herausgedrängt und durch Männer ersetzt worden sind.

3. Welche Entwicklung hinsichtlich der gesellschaftlichen Teilhabe von Frauen erwartet die Bundesregierung in den nächsten Jahren, und durch welche Maßnahmen will sie eine stärkere Beteiligung von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in der Gesellschaft fördern?

Trotz vieler Hindernisse beteiligen sich immer mehr Frauen am öffentlichen Leben. Das liegt u. a. daran, daß Bildungsstand und die berufliche Qualifikation der Frauen erheblich höher sind als z. B. vor zwanzig Jahren und noch steigen. Die noch vorhandenen Defizite in der Gleichberechtigung lassen sich zum einen durch Öffentlichkeitsarbeit, Projektförderung und Handlungsanweisungen im Sinne von Verwaltungsvorschriften und zusätzlich durch gezielte gesetzliche Regelungen zu einzelnen Schwerpunktbereichen überwinden. Die Bundesregierung wird deshalb – in Umsetzung der Regierungserklärung des Bundeskanzlers vom 30. Januar 1991 und des Artikels 31 des Einigungsvertrages, die Gesetzgebung im Sinne einer verbesserten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weiterzuentwickeln – im Frühjahr 1993 den Entwurf eines Zweiten Gleichberechtigungsgesetzes beschließen, der u. a. auch ein Gesetz über die Berufung und Entsend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Gremien im Einflußbereich des Bundes enthält.

Die Bundesregierung ist der Auffassung, daß in den nächsten Jahren weitere Initiativen zur Erhöhung des Frauenanteils in Führungspositionen erforderlich sind. Sie hat daher eine Studie in Auftrag gegeben, die die inner- und außerbetrieblichen Qualifizierungsmöglichkeiten für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und für den weiblichen Führungskräftenachwuchs untersuchen soll.

4. In wie vielen Kreisen, kreisfreien Städten und Gemei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ind kommunale Gleichstellungsstellen bzw. Frauenbüros eingerichtet worden, und welche Erfahrungen zu deren Arbeit liegen der Bundesregierung bisher vor?

Seit 1990 si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rund 450 Gleichstellungsstellen in Kreisen, kreisfreien Städten und Gemeinden eingerichtet worden. Die Einsetzung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beruht auf dem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Kommunalverfassung) vom 17. Mai 1990, das bestimmt,

- daß bei der Lösung der Selbstverwaltungsaufgaben in der Gemeinde die 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 zu sichern ist (§ 2 Abs. 3) und
- daß die Gemeinden mit eigener Verwaltung zur Verwirklichung des Grundrechts der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Gleichstellungsbeauftragte zu bestellen haben, die in Gemeinden mit mehr als 10 000 Einwohnern hauptamtlich tätig sind (§ 29).

Bis zum Inkrafttreten neuer Gesetze zur Regelung der kommunalen Gebietskörperschaften in jedem einzelnen der neuen Bundesländer gilt die Kommunalverfassung der DDR fort. Die weitere Entwicklung der kommunalen Gleichstellungsstellen hängt daher davon ab, welcher Stellenwert ihnen in der jeweiligen Kommunalgesetzgebung eingeräumt wird. Diese Frage ist bisher noch nicht in allen neuen Bundesländern entschieden. In Brandenburg wird die alte Kommunalver-

fassung der DDR bis auf weiteres in Kraft und damit die gesetzliche Verankerung der Gleichstellungsstellen bestehen bleiben. In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ist das Thema noch in der Diskussion.

Die Bundesregierung setzt sich im Rahmen ihrer Möglichkeiten dafür ein, daß die Gleichstellungs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icht abgebaut oder in ihrer Position eingeschränkt werden. Die Bundesregierung hält die Arbeit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für sehr wichtig. Gerad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o die Frauen von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Umgestaltung besonders stark betroffen sind, leisten Gleichstellungsbeauftragte sehr viel praktische Hilfe vor Ort. Sie bieten individuelle Beratung an, stellen für rat- und hilfeschuchende Frauen Kontakte zu anderen Einrichtungen her und sind Vermittlerinnen zwischen den Frauen in der Kommune und der Verwaltung. Sie tragen dazu bei, die Programme und Projekte, die die Bundesregierung für Frau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startet hat, umzusetzen.

Gleichstellungsbeauftragte sind Multiplikatorinnen für die praktische Umsetzung des im Grundgesetz verankerten Gleichstellungsgebots.

Zu den Arbeitsschwerpunkten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ählen vor allem die Situation der Frauen auf dem Arbeitsmarkt, Kinderbetreuung, Frauen im ländlichen Raum, ältere Frauen, Alleinerziehende. Sie sind außerdem Ansprechpartnerinnen für die Mitarbeiterinnen in der Verwaltung und setzen sich für deren berufliche Förderung ein.

Die Bundesregierung steht, vertreten durch das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in engem Kontakt zu den Gleichstellungsbeauftrag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 zahlreichen Konferenzen, darunter die vom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finanzierten und gemeinsam mit den jeweiligen Landesgleichstellungsbeauftragten organisierten Regionalkonferenzen in allen neuen Ländern, und in vielen Gesprächen mit Gleichstellungsbeauftragten und mit Sprecherinnen der Landesarbeitsgemeinschaften der kommunalen Gleichstellungsstellen ist deutlich geworden, daß die Gleichstellungsbeauftragten aufgrund der unsicheren rechtlichen Lage mit Besorgnis in die Zukunft sehen. Die Gespräche haben auch gezeigt, daß die Arbeitssituation verbessert werden könnte. Vielfach äußern Gleichstellungsbeauftragte den Wunsch nach weitergehenden und klar definierten Kompetenzen, einer besseren finanziellen, personellen und sachlichen Ausstattung der Gleichstellungsstelle und einer angemesseneren Vergütung, entsprechend der Fülle der zu bewältigenden Aufgaben.

Detaillierte Aussagen über Tätigkeiten und Aufgaben, über Kompetenzen, über organisatorische Ansiedlung und Ausstattung der Gleichstellungsstellen und über die Vergütung der Gleichstellungsbeauftrag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ird der 2.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Gleichstellungsstellen in Bund, Ländern und Kommunen liefern, der Ende 1992 fertiggestellt sein wird.

5. Inwieweit teilt die Bundesregierung die eingangs zitierte Befürchtung des EG-Ausschusses für die Rechte der Frau hinsichtlich der negativen Auswirkungen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auf die Lage der Frauen, und welche Maßnahmen will sie ergreifen, um diese für die Frau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verhindern bzw. zu mildern?

Die Bundesregierung ist der Auffassung, daß die Vollendung des Binnenmarktes Wirtschaftswachstum und Beschäftigung fördern und sich somit auch positiv für Frauen auswirken wird.

Unabhängig davon ist jedoch die Tatsache unbestritten, daß Frauen in allen Mitgliedstaaten im Arbeitsleben noch unterrepräsentiert sind. Frauenförderprogramme im öffentlichen Dienst und in der privaten Wirtschaft müssen deshalb dazu beitragen, die Ausbildungs- und Arbeitsmarktchancen von Frauen in den qualifizierten Berufen und Beschäftigungsbereichen zu verbessern.

Die Bundesregierung hat bereits in ihrer Antwort auf die Große Anfrage zu „Binnenmarkt und Frauenpolitik“, Drucksache 11/6334, auf die besondere Situation von Frauen im Zusammenhang mit der Vollendung des Binnenmarktes hingewiesen.

Sie hat die Entschließung des EG-Ministerrates zum dritten mittelfristigen Aktionsprogramm der Europäi-

schen Gemeinschaften für die Chancengleichheit von Frauen und Männern (1991 bis 1995) vom 21. Mai 1991 unterstützt. Dieses Aktionsprogramm verfolgt – wie die beiden vorangegangenen Programme – das Ziel, die Benachteiligung von Frauen auf dem Arbeitsmarkt und in der Gesellschaft aufzuheben und die Chancengleichheit von Frauen und Männern weiterhin auszubauen.

Die Bundesregierung beteiligt sich darüber hinaus im Rahmen der Gemeinschaftsinitiative NOW (New opportunities for women) und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an der Förderung von spezifischen Frauenprojekten mit dem Ziel,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und Beschäftigung von Frauen weiter zu verbessern.

Auch das in Maastricht beschlossene Vertragswerk ist aus frauenpolitischer Sicht ein großer Schritt nach vorn. Durch Artikel 6 Abs. 3 des Abkommens über eine gemeinsame Sozialpolitik zwischen 11 Mitgliedstaaten wird diesen eine aktive Frauenförderung ermöglicht. Damit erhalten Maßnahmen zur Förderung der Chancengleichheit und zur Vermeidung von geschlechtsspezifischen Nachteilen eine neue Grundlage. Auch die Festschreibung der Chancengleichheit von Männern und Frauen auf dem Arbeitsmarkt und Gleichbehandlung am Arbeitsplatz, wie sie in Artikel 2 Abs. 1 des o.g. Abkommens erfolgt, geht über das hinaus, was in den Römischen Verträgen steht. Dadurch werden die bisherigen Bemühungen der Bundesregierung in diesen Bereichen nachhaltig unterstützt.



문서 번호 36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3 년 [발췌]

1993 년 4 월

담당자 / 기관: 연방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3 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연방지역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또한 아직 방향전환단계에 있다.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변화가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야 별로 상응하는 직업자격조건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는 1992 년도의 경우 사업체 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가 종전보다 약 20 퍼센트 많아져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12,000 여개로 증가될 수 있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방정부의 직업교육 장려는 중소 사업체들이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직업교육훈련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생 및 다른 직업교육부문의 전문인력들의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3.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34.  
Berufsbildungsbericht 1993. Bad Honnef: K.H. Bock Verlag



### 3.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Wie die Wirtschaft befindet sich auch die berufli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immer noch in einer Umorientierungsphase. Viele Betriebe sind nicht mehr oder noch nicht in der Lage auszubilden, andere haben erst begonnen, den eigenen Fachkräftenachwuchs durch Ausbildung zu sichern. Die eigene Verantwortung für die Ausbildung wird von den Betrieben und Verwaltungen noch nicht in ganzer Breite akzeptiert. Gleichzeitig müssen viele Erwerbstätige neue oder zumindest zusätzliche Qualifikationen erwerben. Die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ist überdies von einer in vielen Wirtschaftsbereichen noch unsicheren Zukunft geprägt. Dies erschwert Orientierung und Qualifizierungsplanungen.

#### 3.1 Berufs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ch 1992 konnten Angebot und Nachfrage nach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sgeglichen werden. Insgesamt haben 1992 rund 95 000 Jugendliche in den neuen Ländern ein neues Ausbildungsverhältnis begonnen.

Der Ausbildungsstellenmarkt in den neuen Ländern war 1992 von einem wachsenden betrieblichen Ausbildungsangebot, Tendenzen zu einem Abbau berufsstruktureller Ungleichgewichte sowie wachsenden regionalen Unterschieden geprägt. Das den Arbeitsämtern gemeldete betriebliche Ausbildungsplatzangebot konnte um knapp 20 %, das sind rund 12 000 Stellen, gegenüber dem Vorjahr erhöht werden. Gleichzeitig veränderte sich 1992 die Berufsstruktur der Angebote zugunsten der Dienstleistungsberufe. Gleichwohl blieben Ungleichgewichte zwischen Angebot und Nachfrage bestehen. In einigen gewerblich-technischen Berufen gab es auch Schwierigkeiten, Ausbildungsstellen zu besetzen.

Insgesamt reichte jedoch das betriebliche Ausbildungsplatzangebot in den neuen Ländern allein nicht aus, um Nachfrage und Angebot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auszugleichen. Hierfür war auch 1992 der Einsatz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mit Förderung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 40 c AFG) erforderlich. Im Vergleich zum Vorjahr (rund 38 000 Plätze, davon rund 3 100 nach § 40 c Abs. 2 AFG) war das mit rund 20 200 Plätzen in deutlich geringerem Umfang notwendig. Darin waren rund 4 200 Plätze nach § 40 c Abs. 2 AFG enthalten.

Hinzu kommen die im Aufbau befindlichen acht auß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werke, die bereits rund 1 000 Ausbildungsplätze für behinderte Jugendliche bereitstellen, die während ihrer Ausbildung besonderer medizinischer und therapeutischer Hilfen bedürfen. Diese Einrichtungen, die sich in den alten Ländern außerordentlich bewährt haben, werden im Endausbau in den neuen Ländern rund 1 800 Erstausbildungsplätze anbieten.

Nach einer Erheb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aben rund 19 000 Jugendliche aus den neuen Ländern 1992 ein Ausbildungsverhältnis in den alten Ländern begonnen. Im Vergleich zum Vorjahr waren das rund 3 000 weniger (vgl. **Teil II, Kapitel 1.2.2**). Die Daten decken sich mit Ergebnissen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wonach die Bereitschaft junger Menschen aus den neuen Ländern abnimmt, für eine Ausbildung notfalls auch in die alten Länder umzuziehen.

#### 3.1.1 Verbleib der Bewerber

Von Oktober 1991 bis Ende September 1992 hatten sich nach Angaben der Berufsberatungstatistik insgesamt 138 300 Jugendliche als Bewerber bei den Arbeitsämtern gemeldet. 78 500 Bewerber (56,7 %) sind bis Ende September 1992 in betriebliche Ausbildungsstellen eingemündet, zum Teil auch in Ausbildungsstellen der alten Länder. Der entsprechende Einmündungsanteil in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lag in den alten Ländern Ende September 1992 bei 59,8 % der Bewerber, also trotz eines erheblichen Überangebots an Berufsausbildungsstellen nur geringfügig höher.

Weitere 20 200 Bewerber (14,6 %) haben Ausbildungsplätze in außerbetrieblichen Ausbildungseinrichtungen erhalten. Insgesamt haben damit knapp 99 000 Bewerber (71,4 %) eine betriebliche oder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angetreten. Da das Arbeitsamt nicht über alle Einmündungen informiert ist, liegt die Gesamtzahl der neu abgeschlossenen Verträge (95 000 in den neuen Ländern zuzüglich 19 000 Ausbildungsverhältnisse in den alten Ländern) darüber. Damit war die Beruf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zu 87 % über Stelleneinmündungen von Ausbildungsplätze suchenden Jugendlichen informiert.

Knapp 13 % der Bewerber, das sind rund 18 000, haben sich für eine schulische Berufsausbildung oder für einen weiteren Besuch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zumeist der gymnasialen Oberstufe, entschieden. In den alten Ländern lag dieser Bewerberanteil bei 13,6 %, also ebenfalls in vergleichbarer Höhe.

Die übrigen knapp 22 000 Bewerber (15,7 %) haben zu geringen Anteilen entweder eine Arbeitstelle gewählt (1,6 %, in den alten Ländern: 5,2 %), sind in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des Arbeitsamtes übergegangen (1,9 %, in den alten Ländern: 1 %) oder wurden als noch nicht vermittelte Bewerber (0,9 %, in den alten Ländern: 2,9 %) ausgewiesen; 11,3 % der Bewerber (in den alten Ländern: 17,4 %) sind vo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unter dem Merkmal „sonstiger Verbleib“ zusammengefaßt worden. Dahinter stehen u.a.: Verbleib im bisherigen Arbeits- bzw. Ausbildungsverhältnis, Wehr- oder Zivildienst oder ein „freiwilliges soziales Jahr“ aber auch Bewerber, die sich nicht mehr bei der Berufsberatung gemeldet haben.

#### 3.1.2 Regionale 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Die Ausbildungs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ist regional sehr unterschiedlich (vgl. **Übersicht 1**). Entsprechend dem unterdurchschnittlichen Einmündungsanteil der Bewerber in betriebliche Ausbildung mußten vor allem in Mecklenburg-Vorpommern (51,4 %) und Brandenburg (51,7 %) sowie in strukturschwachen Teilen Sachsens Defizite an betrieblichen Ausbildungsstellen ausgeglichen werden. Günstiger im Vergleich zum Durchschnitt der neuen Länder war die Situation in Sachsen-Anhalt (62 %) und Thüringen (58,7 %) sowie im Ostteil Berlins (61 %). Aber auch hier reichte das betriebliche Ausbildungsangebot noch nicht aus, allen Bewerbern einen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 anzubieten.

Innerhalb der Länder gab es Unterschiede je nach Nähe zum westdeutschen Ausbildungsstellenmarkt.

Nahezu spiegelbildlich erfolgte der Einsatz auß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maßnahmen nach dem AFG (vor allem nach § 40 c Abs. 4 AFG/ DDR), in die 14,6 % der Bewerber in den neuen Ländern eingemündet sind. In Mecklenburg-Vorpommern lag die Einmündungsrate der Bewerber in außerbetrieb-

liche Ausbildungseinrichtungen bei 21,3 %, in Brandenburg lag die Quote bei 16,9 % und in Sachsen bei 15,2 %. Bezogen auf die Bewerberzahl erfolgte ein besonders hoher Übergang in außerbetriebliche Stellen in den Arbeitsamtsbezirken Rostock (28 %) und Stralsund (21,9 %), in Eberswalde (22,5 %) und Neuruppin (26,2 %) sowie in Oschatz (22,7 %).

Aufgrund der günstigeren betrieblichen Angebotssituation lag die Einmündungsrate von Bewerbern in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sowohl in Sachsen-Anhalt (11,7 %) als auch in Thüringen (13 %) und dem Ostteil Berlins (6,3 %) zum Teil deutlich unter dem Durchschnitt der neuen Länder.

Entlastende Effekte auf den Ausbildungsstellenmarkt in den neuen Ländern hatten auch die Übergänge von Bewerbern in berufliche und allgemeinbildende Schulen. Dies gilt vor allem für Brandenburg und Sachsen, aber auch für den Ostteil Berlins (vgl. **Übersicht 1**).

### 3.1.3 Einflußfaktoren der Ausbildungs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Die Steigerung des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angebots, die durch die vielfältigen Anstrengungen von Staat und Wirtschaft zur Verbesserung der Ausbildungsfähigkeit und Ausbildungsbereitschaft der Betriebe in den neuen Ländern unterstützt wurde, ist ein deutliches Zeichen eines sich stabilisierenden Ausbildungsstellenmarktes in den neuen Ländern. Dafür spricht auch, daß sich der Bedarf an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im Rahmen der Förder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gegenüber dem Vorjahr nahezu halbiert hat — allerdings im wesentlichen wegen des nachhaltigen Rückgangs der Zahl von „Konkurslehrlingen“ die nach Auflösung ihrer betrieblichen Ausbildungsverträge in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sverhältnisse übernommen wurden. Ferner dauert das Existenzgründungsgeschehen vor allem im Bereich des Handwerks und der Freien Berufe an. Das wirkt sich auch auf das Angebot an Ausbildungsplätzen positiv aus.

#### •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den Bund

Zur Steigerung der Ausbildungsfähigkeit und Ausbildungsbereitschaft kleiner und mittlerer Betriebe in den neuen Ländern fördern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und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überbetriebliche Berufsbildungsstätten. Für die neuen Länder ist hierzu ein mehrstufiges Programm erarbeitet worden. In der Anfangsphase orientiert sich die Förderung an einer regionalen Schwerpunktbildung und konzentriert sich grundsätzlich auf Berufsfelder mit Priorität für das Handwerk, die Kleinindustrie und die Bauwirtschaft. Dabei wird die Überbrückung regionaler und sektoraler Ausbildungsengpässe berücksichtigt. Mittelfristig soll ein Ausbaustand erreicht werden, der dem der alten Länder entspricht.

Zur Verbesserung der Ausbildungsqualität und der Prüfungsvoraussetzungen in den neuen Ländern ha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2 die Modernisierung von Ausbildungswerkstätten in ausgewählten Industriebetrieben unterstützt. Die geförderten Ausstattungen dienen der ergänzenden über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in der Region; sie ermöglichen den Auszubildenden der jeweiligen Region eine moderne, den zukünftigen Anforderungen gerecht werdende Qualifizierung und eröffnen den Kammern Prüfungsmöglichkeiten entsprechend den Ausbildungsordnungen (vgl. **Teil II, Kapitel 3.2.8**).

Eine mehrjährige Informations- und Motivationskampagne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trägt bei ausbildungsfähigen

Betrieben und ausbildungswilligen Jugendlichen dazu bei, Eigeninitiative und Verantwortungsbewußtsein in Ausbildungsfragen zu wecken und durch Abbau von Wissensdefiziten in diesem Bereich die Ausbildungsbereitschaft zu fördern.

Im Rahmen der Modernisierung der Beruf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ist die Qualifizierung des Ausbildungspersonals und anderer Fachkräfte der beruflichen Bildung von zentraler Bedeutung. Bisher wurden mehr als 14400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in Maßnahmen der fachlichen und methodisch-didaktischen Qualifizierung mit Mittel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gefördert.

„Transfer-Vorhaben“ im Rahmen der Modellversuchsförderung sollen den neuen Ländern Ergebnisse aus Versuchprojekten der alten Länder zur Verfügung stellen und sie bezogen auf die besondere Situation und die vordringlichen Ziele der neuen Länder weiterentwickeln.

#### • Länderprogramme

Die neuen Länder haben durch ihre Programme nachhaltig dazu beigetragen, daß das Vermittlungsjahr 1991/92 — wie schon im Vorjahr — erfolgreich abgeschlossen werden konnte.

Die Länderprogramme zielten vor allem auf zusätzliche betriebliche Ausbildungsstellen über den jeweiligen betrieblichen Eigenbedarf hinaus, auf Betriebe, die mit der Ausbildung neu begannen oder ihre Ausbildungskapazitäten über den Stand von 1991 ausgeweitet haben. Die Förderung umfaßte einmalige Zuschüsse von 4000 DM bis 8000 DM pro förderungsfähiges Auszubildendes, in besonderen Einzelfällen auch 10000 DM. Günstigere Förderkonditionen erhielten Betriebe für die Ausbildung von jungen Frauen, Konkurslehrlingen und Benachteiligten.

#### • Aktivitäten der Organisationen der Wirtschaft

Auch die Organisationen der Wirtschaft haben durch vielfältige Maßnahmen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s- und Weiterbildung beigetragen. Diese Maßnahmen zielten vor allem auf Aus- und Weiterbildungsberatung der Betriebe und auf d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und Materialien, Schulungen von Ausbildern und Prüfungspersonal sowie auf den Erhalt von bedrohten Ausbildungskapazitäten durch ihre Aufnahme in „Ausbildungsringen“.

#### • Ost-West-Mobilität

Zum Ausgleich regionaler Ungleichgewichte fördert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regionale Mobilität von Auszubildenden durch Berufsausbildungsbeihilfen (§ 40 AFG). Das gleiche gilt für Auszubildende, die im Rahmen von Ost-West-Ausbildungspartnerschaften bestimmte betriebliche Ausbildungsabschnitte in den alten Ländern absolvieren. Berufsausbildungsbeihilfen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Einkommens des Auszubildenden, seiner Eltern und gegebenenfalls seines Ehepartners als Zuschuß gewährt, wenn der Auszubildende außerhalb des Haushalts der Eltern untergebracht ist und, sofern er minderjährig und nicht verheiratet ist, die Ausbildungsstätte von der Wohnung der Eltern aus nicht in angemessener Zeit erreichen kann.

Gut die Hälfte aller Auszubildenden aus den neuen Ländern mit einem Ausbildungsplatz in den alten Ländern (57 %) erreichte nach Ergebnissen einer Studie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m November 1991 und vom Mai 1992 den Ausbildungsort durch tägliches Pendeln. Von den insgesamt rund 45000 Auszubildenden (alle Ausbildungsjahre) mit einem Ausbildungsplatz im Westen pendeln rund 26000 täglich zwischen Wohnort im Osten und Ausbildungsort im Westen.



## Übersicht 1: Verbleib der Bewerber 1992 in den neuen Ländern

Land/ Arbeitsamtsbezeichnung	Bewerber	Einmün- dung Betrieb	Einmün- dung BÜE	Einmün- dung Schule	Sonstige Erledigung	Anteil Betrieb	Anteil BÜE	Anteil Schule	Anteil Sonstiges
	1	2	3	4	5	3=2/1	7=3/1	8=4/1	9=5/1
<b>Neubrandenburg</b>	5329	2560	1058	592	1119	48,0	19,9	11,1	21,0
Rostock	4982	2507	1393	382	700	50,3	28,0	7,7	14,1
Schwerin	4992	2948	780	529	735	59,1	15,6	10,6	14,7
Stralsund	3095	1434	679	422	560	46,3	21,0	13,6	18,1
<b>Mecklenburg-Vorpommern</b>	<b>18398</b>	<b>9449</b>	<b>3910</b>	<b>1925</b>	<b>3114</b>	<b>51,4</b>	<b>21,3</b>	<b>10,5</b>	<b>16,9</b>
Cottbus	5328	3135	790	776	627	58,8	14,8	14,6	11,8
Eberswalde	3000	1389	674	591	346	46,3	22,5	19,7	11,5
Frankfurt (Oder)	3558	1638	654	580	686	46,0	18,4	16,3	19,3
Neuruppin	4039	1990	1059	489	501	49,3	26,2	12,1	12,4
Potsdam	5194	2771	397	815	1211	53,4	7,6	15,7	23,3
<b>Brandenburg</b>	<b>21119</b>	<b>10923</b>	<b>3574</b>	<b>3251</b>	<b>3371</b>	<b>51,7</b>	<b>16,9</b>	<b>15,4</b>	<b>16,0</b>
Dessau	2364	1280	183	233	668	54,1	7,7	9,9	28,3
Halberstadt	2613	1888	205	247	273	72,3	7,8	9,5	10,4
Halle	4049	2459	386	627	577	60,7	9,5	15,5	14,3
Magdeburg	5093	3489	367	425	812	68,5	7,2	8,3	15,9
Merseburg	3343	1886	518	450	489	56,4	15,5	13,5	14,6
Sangerhausen	2565	1553	511	293	208	60,5	19,9	11,4	8,1
Stendal	2594	1409	515	309	361	54,3	19,9	11,9	13,9
Wittenberg	1348	895	119	198	136	66,4	8,8	14,7	10,1
<b>Sachsen-Anhalt</b>	<b>23969</b>	<b>14859</b>	<b>2804</b>	<b>2782</b>	<b>3524</b>	<b>62,0</b>	<b>11,7</b>	<b>11,6</b>	<b>14,7</b>
Altenburg (S)	590	382	16	111	81	64,7	2,7	18,8	13,7
Annaberg	3616	1726	675	564	651	47,7	18,7	15,6	18,0
Bautzen	6839	3394	1468	1268	709	49,6	21,5	18,5	10,4
Chemnitz	4167	2256	638	253	1020	54,1	15,3	6,1	24,5
Dresden	4779	2582	356	998	843	54,0	7,4	20,9	17,6
Leipzig	6466	5035	326	632	473	77,9	5,0	9,8	7,3
Oschatz	1655	918	375	202	160	55,5	22,7	12,2	9,7
Pirna	3251	1620	700	594	337	49,8	21,5	18,3	10,4
Plauen	2331	1192	416	316	407	51,1	17,8	13,6	17,5
Riesa	2422	1327	408	310	377	54,8	16,8	12,8	15,6
Zwickau	3301	1805	620	368	508	54,7	18,8	11,1	15,4
<b>Sachsen</b>	<b>39417</b>	<b>22237</b>	<b>5998</b>	<b>5616</b>	<b>5566</b>	<b>56,4</b>	<b>15,2</b>	<b>14,2</b>	<b>14,1</b>
Altenburg (TH)	1216	672	227	105	212	55,3	18,7	8,6	17,4
Erfurt	5350	3354	850	522	624	62,7	15,9	9,8	11,7
Gera	3228	1919	389	515	405	59,4	12,1	16,0	12,5
Gotha	3698	2429	491	317	461	65,7	13,3	8,6	12,5
Jena	3619	2078	475	264	802	57,4	13,1	7,3	22,2
Nordhausen	3558	1868	504	580	606	52,5	14,2	16,3	17,0
Suhl	5036	2781	409	556	1290	55,2	8,1	11,0	25,6
<b>Thüringen</b>	<b>25705</b>	<b>15101</b>	<b>3345</b>	<b>2859</b>	<b>4400</b>	<b>58,7</b>	<b>13,0</b>	<b>11,1</b>	<b>17,1</b>
<b>Berlin (Ost)</b>	<b>9734</b>	<b>5927</b>	<b>613</b>	<b>1438</b>	<b>1756</b>	<b>60,9</b>	<b>6,3</b>	<b>14,8</b>	<b>18,0</b>
<b>Neue Länder</b>	<b>138342</b>	<b>78496</b>	<b>20244</b>	<b>17871</b>	<b>21731</b>	<b>56,7</b>	<b>14,6</b>	<b>12,9</b>	<b>15,7</b>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Berufsberatungsstatistik

Der überwiegende Teil der von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im Westen angenommenen Ausbildungsplätze liegt somit im ehemaligen Grenzgebiet. Dies entspricht dem Wunsch der meisten jungen Menschen, daß die Ausbildungsstelle von der elterlichen Wohnung aus täglich erreichbar sein sollte.

Über 40% der Auszubildenden (das sind nach Erhebungen des IAB rund 20000 Jugendliche) aus den neuen Ländern, die im Westen ausgebildet werden, leben längere Zeit vom elterlichen Zuhause entfernt. Die Mehrzahl von ihnen lebt allein oder in einem Wohnheim. Die übrigen haben andere Lösungen, teilweise mit Partnern oder Freunden, gefunden.

Nach Analysen des IAB ist die Ost-West-Mobilität vor allem bei jungen Frauen festzustellen. Das wohnortnahe Pendeln spielt bei ihnen eine deutlich größere Rolle als bei den jungen Männern. Mehr als die Hälfte der jungen Männer, gut ein Drittel der jungen Frauen kann den Ausbildungsort im Westen nicht über tägliches Pendeln erreichen.

### 3.2 Berufliche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kommt in den neuen Ländern eine Schlüsselrolle für die Bewältigung des wirtschaftlichen Erneuerungs- und Aufbauprozesses zu.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konnten 1992 in den neuen Ländern rund 888000 Eintritte in Fort- und Umschulungsmaßnahmen ermöglicht werden (1991: 892000). Für 1993 ist eine Absenkung dieser sehr hohen Zahlen vorgesehen, um eine Konsolidierung zu erreichen.

Die Förder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konzentrieren sich neben der Qualifizierung des Personals in der beruflichen Bildung und den Vorhaben zum Innovationstransfer auf folgende Schwerpunkte:

- Förderung von Modellen zur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sberatung,
- Durchführung entsprechender Seminare,
- Bau und Ausstattung überbetrieblicher Weiterbildungsstätten,
- Entwicklung von Qualifizierungsmaßnahmen für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Tätigen,
- Entwicklung von Brücken-Curricula zwischen beruflichen Abschlüssen in der DDR und Abschlüssen in den alten Ländern in ausgewählten Berufsfeldern,
- Wissenschaftliche Analyse des notwendigen Umqualifizierungsprozesses bei der Umstellung von Planwirtschaft zur Marktwirtschaft, sowie Prozeß- und Maßnahmeberatung,
- Öffentlichkeitsarbeit zur Aktivierung der Motivation zur Weiterbildung auch im Rahmen der Betriebe.

Angesichts des großen Umfangs notwendiger Qualifizierung werden auch in den kommenden Jahren erhebliche Anstrengungen notwendig sein, um auf allen Ebenen, d. h. bei Führungskräften, Facharbeitern, bei Hochschulabsolventen sowie bei An- und Ungelernten neue Formen der Qualifizierung zu entwickeln. Die Bundesregierung fördert entsprechende Projekte.

## 4. Nachfrage und Angebot an Ausbildungsplätzen

### 4.1 Entwicklungen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1992

Über 1,6 Millionen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1990/1991: 1,57 Millionen Ratsuchende) haben sich im Beratungsjahr 1991/92 an die Berufsberatung der Arbeitsämter gewandt; darunter 317800 Ratsuchende (1990/91: 283000) in den neuen Ländern.

Damit wird das Dienstleistungsangebot der Beruf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zunehmend in Anspruch genommen. Grundlage für diese Entwicklung sind die beachtlichen Anstrengungen der Berufsberatung, ihr Leistungsangebot bei Jugendlichen, Lehrern, aber auch bei Betrieben, Kammern und Innungen vorzustellen und bekannt zu machen, sowie ihre gewachsene Kompetenz.

Im Beratungsjahr 1991/92 wurden von den Arbeitsämtern der neuen Länder 36200 Schulbesprechungen, 5200 Elternveranstaltungen, 3500 Vortragsveranstaltungen und 9400 sonstige Informationsmaßnahmen, vor allem für Lehrer und Gruppenvertreter, durchgeführt. Für Schüler und Studenten sind weitere 1300 Seminare veranstaltet worden. Besonderen Wert wurde auf konsequente Aufklärungsarbeit über die Bedeutung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und auf aktive Stellenaquisition gelegt. So wurden bei über 113000 Außendienstkontakten mit Betrieben, Kammern, Innungen und außer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vor allem Gespräche zur Gewinnung vo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71300), zur Information der Ausbildungsbetriebe und zur nachgehenden Betreuung der Auszubildenden während der Ausbildung geführt.

Diese Aktivitäten der Arbeitsämter in den neuen Ländern haben unter anderem mit dazu beigetragen, daß sowohl die Jugendlichen als auch die Betriebe früher das Beratungsangebot der Berufsberatung nutzen: Ende Mai 1992 hatten sich bereits 84% der bis Ende September 1992 gemeldeten Bewerber beim Arbeitsamt um einen Ausbildungsplatz beworben, gegenüber 77% Ende Mai 1991; die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 waren Ende Mai 1992 bereits zu 88%, Ende Mai 1991 erst zu 71% dem Arbeitsamt zur Vermittlung angeboten worden.

#### 4.1.1 Berufsberatungsstatistik<sup>1)</sup>

Wie im Vorjahr ist in den alten Ländern die Zahl der gemeldeten Ausbildungsstellenbewerberinnen (-6,0%) stärker zurückgegangen als die der Ausbildungsstellenbewerber (-1,5%). Der Rückgang der Bewerberzahlen insgesamt hat sich gegenüber dem Vorjahr damit deutlich verlangsamt, von -9,8% im Beratungsjahr 1990/91 auf -3,8% 1991/1992. Gleichzeitig sank der Anteil junger Frauen an der Gesamtzahl der Bewerber auf rund 49% (1991: 50% 1990: 52%, 1989: 54%). Insofern gehören Frauen statistisch nicht mehr zu den Problemgruppen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in den alten Ländern.

<sup>1)</sup> Bei der Interpretatio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ist zu beachten, daß es sich um Ergebnisse einer Geschäftsstatistik handelt, d. h. es werden nur solche Berufsausbildungsstellen und Bewerber ausgewiesen, die bei den Arbeitsämtern gemeldet sind. Die Daten geben Aufschluß über die Inanspruchnahme der Berufsberatung. Aus diesen Zahlen kann deshalb nur bedingt Rückschluß auf das Gesamtangebot und die Gesamtnachfrage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gezogen werden, da sich die derzeitige Höhe des Einschaltgrades der Berufsberatung nicht abschätzen läßt.

문서 번호 37

브란덴부르크 주 계속교육의 규율 및 진흥을 위한 법

1993 년 12 월 15 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계속교육진흥법의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변경되었다.

- 계속교육 개념과 그 의미: 계속교육은 교육부문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1 절)
- 계속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학습의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 (1 절)
- 계속교육의 운영주체 및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만들 권리를 지닌다 (2 절)

출처: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26, S. 49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9-331



sind die Einrichtungen, die ein öffentliches und flächendeckendes Weiterbildungsangebot unterbreiten müssen.

[...]

Ich bin mir wohl bewußt, daß es nicht sehr schwierig ist, die Bedeutung der Weiterbildung hier öffentlich zu deklamieren, andererseits jedoch um die Knappheit der Ressourcen für diesen Bereich zu wissen. Wenn Weiterbildung eine grundlegende Voraussetzung für die Entwicklung, insbesondere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ist und tatsächlich als eine fundamentale Gemeinschaftsaufgabe verstanden wird, dann müssen auch die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erforderlichen Mittel bereitgestellt werden. Auch dieser Seite der Problematik ist im Weiterbildungsgesetz Rechnung zu tragen.

Neben der bereits erfolgten Finanzierung von Lehrerstellen an Volkshochschulen zur Sicherung eines Angebotes zum nachträglichen Erwerb von schulischen Abschlüssen ist über das Weiterbildungsgesetz die institutionelle Förderung von Trägern der Weiterbildung und Projektförderung zu regeln. Projektförderung sollte in besonderer Weise Weiterbildungsmaßnahmen zur Förderung der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und im ökologischen Bereich berücksichtigen.

[...]

*Quelle:* Bundesminister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Qualität der Weiterbildung sichern. Zweites Kolloquium zu Fragen der Weiterbildung am 15. und 16. April 1991 in Potsdam, Bonn 1991.

## 9.14 *Gesetz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vom 15. Dezember 1993*

### Grundsätze

#### § 1 Begriff und Stellung der Weiterbildung

(1) Die Weiterbildung ist ein integrierter und gleichberechtigter Teil des Bildungswesens. Weiterbildung im Sinne des Gesetzes umfaßt alle Formen der Fortsetzung, Wiederaufnahme oder Ergänzung organisierten Lernens außerhalb der Bildungsgänge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n und der berufsbildenden Schulen. Soweit die außerschulische Jugendbildung nicht anderweitig geregelt ist, gehört sie zur Weiterbildung im Sinne dieses Gesetzes. Die Hochschul- und Berufsbildung fallen nicht unter dieses Gesetz.

(2) Die Träger und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haben das Recht auf selbständige Lehrplangestaltung.

[...]

## § 2 Ziele, Aufgaben und Inhalte der Weiterbildung

(1) Weiterbildung dient der Verwirklichung des Rechts auf Bildung. Sie steht allen Menschen im Land offen.

(2) Weiterbildung soll durch bedarfsgerechte Angebote zur Chancengleichheit beitragen, die Vertiefung und Ergänzung vorhandener oder den Erwerb neuer Kenntnisse, Fähigkeiten und Qualifikationen ermöglichen, zur Orientierung und Lebenshilfe dienen, zu selbständigem, eigenverantwortlichem und kritischem Handeln im persönlichen, sozialen, politischen, kulturellen und beruflichen Leben befähigen. Dazu gehört auch die Fähigkeit zum verantwortlichen Umgang mit der Natur. Mit der Weiterbildung ist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zu fördern.

(3) Weiterbildung umfaßt neben abschlußbezogenen Lehrgängen insbesondere Angebote der allgemeinen, beruflichen, kulturellen und politischen Bildung. Auf die integrative Vermittlung der jeweiligen Inhalte ist hinzuwirken.

[...]

## § 3 Träger, Einrichtungen und Landesorganisationen der Weiterbildung

(1) Träger der Weiterbildung sind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s, die durch ihre Einrichtungen Veranstaltungen der Weiterbildung in eigener Verantwortung organisieren, öffentlich anbieten und durchführen lassen.

[...]

## § 4 Die Aufgaben des Landes

(1) Die Weiterbildung ist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durch das Land zu fördern. Dazu gewährt das Land finanzielle Unterstützung gemäß § 27.

[...]

## § 5 Aufgaben der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1) Die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sichern für ihr Gebiet ein Weiterbildungsangebot gemäß § 6 unter Berücksichtigung der Trägervielfalt. In der Regel bedienen sie sich dazu einer Weiterbildungseinrichtung.

(2) Kreise und kreisfreie Städte können zur gemeinsamen Erfüllung der Aufgaben nach Absatz 1 Zweckverbände bilden oder öffentlich-rechtliche Vereinbarungen nach Maßgabe des Gesetzes über kommunale Gemeinschaftsarbeit im Land Brandenburg schließen.

## § 6 Grundversorgung

(1) Die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haben als Mindestangebot eine Grundversorgung sicherzustellen. Der Umfang der Grundversorgung bemißt sich an der Einwohnerzahl der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2) Die Grundversorgung umfaßt die in § 2 Abs. 3 aufgeführten Bereiche.

[...]

(4) Die Grundversorgung wird von anerkannten Einrichtungen in kommunaler oder freier Trägerschaft erbracht. Das für Bildung zuständige Mitglied der Landesregierung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die Durchführung der Grundversorgung zu regeln. Die Rechtsverordnung bedarf der Zustimmung des für Bildung zuständigen Ausschusses des Landtages.

[...]

## Bildungsfreistellung

### § 14 Grundsätze

(1) Beschäftigte haben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unter Fortzahlung des Arbeitsentgelts gegenüber ihrer Beschäftigungsstelle Anspruch auf Freistellung von der Arbeit zur Teilnahme an anerkannte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gemäß § 24 zum Zwecke beruflicher, kultureller oder politischer Weiterbildung.

[...]

### § 15 Dauer der Bildungsfreistellung

(1) Die Bildungsfreistellung beträgt zehn Arbeitstage innerhalb eines Zeitraumes von zwei aufeinanderfolgenden Kalenderjahren.

(2) Wird regelmäßig an mehr oder weniger als fünf Tagen in der Woche gearbeitet, so erhöht oder verringert sich der Anspruch gemäß Absatz 1 entsprechend. Bruchteile eines Tages werden zugunsten des Anspruchs aufgerundet.

[...]

### § 24 Anerkennung vo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zur Bildungsfreistellung

(1) Anerkennungsfähig sind Veranstaltungen, die ausschließlich der Weiterbildung im Sinne des § 14 Abs. 1 dienen und von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durchgeführt werden. Als solche sind neben den anerkannten Einrichtungen der kommunalen und freien Träger gemäß § 7 insbesondere Heimbildungsstätten und Bildungseinrichtungen der Arbeitgeberorganisationen und Gewerkschaften anzusehen. Anerkennungsfähig sind außerdem die Veranstaltungen der außerschulischen Jugendbildung und Veranstaltungen, die von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gefördert werden. Die zur Durchführung der Bildungsveranstaltungen erforderlichen persönlichen und sächlichen Voraussetzungen müssen gegeben sein. Die Anerkennung ist zu versagen, wenn die Ziele der Veranstalter oder Veranstaltungen nicht mit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Verfassung des Landes im Einklang stehen.

[...]

### § 25 Kinderbetreuung

Wird nachgewiesen, daß während der Unterrichtszeiten der Bildungsfreistellungsmaßnahmen von Heimbildungsstätten für Kinder bis zu sechs Jahren, die im Haushalt der freigestellten Person leben, keine anderweitige Betreuung durch das örtliche Angebot von Kindertagesstätten gewährleistet werden kann, ist von der Heimbildungsstätte die Betreuung durch geeignete Personen sicherzustellen.

[...]

### § 30 Übergangsvorschriften

(1) Der Anspruch auf Bildungsfreistellung gemäß §§ 14 bis 26 besteht ab 1. Januar 1996.

[...]

Quelle: GVBl. Brandenburg Nr. 26, S. 497.





문서 번호 38

동서독 지역 조정사무소 주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프로그램

1994 년 2 월 17 일 및 18 일

담당자 / 기관: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 조정기관

내용:

이 문서는 계속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조직한 독일노동실무협회의 업무에 관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는 회원 단체 간의 경험교류 및 계속교육 세미나와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전문가와 실무를 연결해 주는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있다.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서로 체계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직업기술과 관련된 지식의 전수와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별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국가로부터 재원 지원을 받는 영역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력향상 및 기타 자격취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Tagungsort:**

Hotel Fritz Reuter  
Räthenweg  
19063 Schwerin  
Telefon (0385) 29 30

Der Tagungsort liegt am Rande der Landeshauptstadt Schwerin, unmittelbar am Schweriner See.

**Termin:**

17.–18. Februar 1994

**Teilnehmer:**

Die Anzahl der Teilnehmer ist auf 30 Personen begrenzt.

**Kosten:**

100,- DM für Tagung, Unterkunft und Vollverpflegung. Für Teilnehmer und Teilnehmerinn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gilt eine **reduzierte Tagungsgebühr** von 60,-DM.

**Unterbringung:**

Die Unterbringung erfolgt in Einzelzimmern.

**Anmeldung:**

Bis zum 1.2.1994 bei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itte benutzen Sie die beiliegende Anmeldekarte.

**Veranstalter:**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Arbeit e.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in Zusammenarbeit mit

**Zentrum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zebra e.V.**

Bullenhuser Damm 92–94  
20539 Hamburg

**Rückfragen:**

Rückfragen richten Sie bitte a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in Berlin.

Telefon (030) 283 29 51

Ellen-Ruth Schneider, Sabine Brinkmann

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Arbeit e.V.** ist die bundesweite trägerübergreifende Dachorganisation von lokal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rbeitsmarktpolitischen Initiativen und sozialen Betrieben in Deutschland. Sie bündelt und vertritt deren Interessen und fördert die fachliche Weiterentwicklung dieses Arbeitsfeldes.

Das **Zentrum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 zebra e.V.** besteht seit 1987 in Hamburg. Es entwickelt und führt berufsbegleitende Weiterbildungsmaßnahmen für Beschäftigte in Arbeitsförderungsprojekten durch. Durch die Verknüpfung von Arbeit und Qualifizierung sollen die individuellen und fachlichen Voraussetzungen der angesprochenen Personen hinsichtlich ihrer Integrationschance in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verbessert werden.

zebra e.V. ist eine Mitgliedseinrichtung der BAG Arbeit.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wird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gefördert.

Gestaltung: DESIGN 17, Berlin  
Gedruckt auf Recyclingpapier.

BAG

A R B E I T

KOORDINIERUNGS-  
STELLE OST-WEST
 zebra

ENTWICKLUNG UND ORGANISATION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N

ANLEITER  
IN BESCHÄFTIGUNGSPROJEKTEN-  
BERUFSGRUPPE OHNE BERUFSBILD

FACHTAGUNG  
MIT ERFAHRUNGS-AUSTAUSCH  
IN SCHWERIN

AM 17./18. FEBRUAR 1994

Beschäftigungsprojekte und -gesellschaften befinden sich bei ihrer Aufgabenwahrnehmung in einem ständigen Zielkonflikt. Zum einen müssen sie die arbeitsmarktliche und soziale Integration besonders benachteiligter Zielgruppen leisten, zum anderen müssen sie sich mit Produkten und Dienstleistungen am Markt bewähren. Für die Mitarbeiter in solchen Einrichtungen ergeben sich daraus unterschiedliche Rollen, die nach innen und nach außen wahrzunehmen sind, etwa die des „Arbeitsvermittlers“, des „Sozialbetreuers“ oder die des „Produktionsleiters“. Von diesen komplexen Rollenanforderungen ist die Berufsgruppe der Anleiter besonders betroffen. In ihrer täglichen Praxis auf dem Bau oder in der Werkstatt, im Büro oder im Unterrichtsraum der Beschäftigungsprojekte müssen sie arbeits- und sozialpädagogische Aufgaben mit der Vermittlung von Fachwissen des jeweiligen Berufsfeldes verbinden. Dabei sind sie für die Arbeit mit den sogenannten „Problemgruppen“ des Arbeitsmarktes oft schlecht gerüstet, da sie in ihrer eigenen Ausbildung auf diesen Aspekt ihrer Tätigkeit kaum vorbereitet wurden. Ein weiteres Problem sind Spannungen mit Vertretern anderer Berufsgruppen innerhalb des Projektes. Insbesondere die Verständigung mit den Sozialpädagogen ist durch eine wechselseitige Ablehnung der Arbeitsweise und Wertehaltung häufig erschwert.

2

Auf der einen Seite also im Konflikt mit anderen Berufsgruppen im Betrieb oder im Projekt, auf der anderen Seite genauso im Konflikt mit der Lebens- und Arbeitshaltung der Zielgruppe – und zusätzlich noch verantwortlich für ein marktfähiges Produkt. Im Spannungsfeld solch schwer vereinbarer Anforderungen fühlen sich Anleiter oft überfordert und demotiviert. Eine auf den spezifischen Handlungsbereich von Anleitern zugeschnittene Qualifizierung scheint dringend geboten.

Ziel dieser Fachkonferenz ist es, einen Erfahrungsaustausch über die Arbeitsanforderungen von Anleitern und Anleiterinnen in unterschiedlichen Projekten, sozialen Betrieben und ähnlichen Einrichtungen zur Beschäftigungsförderung herzustellen und dabei eine erste Bedarfsermittlung für praxisnahe Bildungsbausteine einer berufsbegleitenden Anleiterqualifizierung vorzunehmen.

Dabei sind insbesondere die im Hinblick auf die Zielgruppenproblematik anders ausgeprägten Erfahrung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zu ermitteln und bei der Ausgestaltung eines Bildungsangebotes mit einzubeziehen.

Die Fachkonferenz richtet sich an Geschäftsführer und Geschäftsführerinnen sowie andere Leitungskräfte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in denen die Zielgruppen des Arbeitsmarktes aus- und weitergebildet oder umgeschult werden.

3

**Donnerstag, 17. Februar 1994**

**bis 12.00 Uhr**

Anreise

**12.00 Uhr**

Imbiß

**12.30 Uhr**

**Begrüßung durch die Veranstalter**

Ellen-Ruth Schneider, BAG Arbei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erlin  
Detlef Scheele, zebra e.V., Hamburg

**13.00 Uhr**

Einführung

**Anleiter – Berufsgruppe im Spannungsfeld konkurrierender Arbeitsanforderungen**

Referent:

Detlef Scheele, zebra e.V.

**13.30 Uhr**

**Anleiter im sozialen Betrieb –**

**Chancen, Schwierigkeiten, Konflikte**

Praxisberichte aus der Sicht

– eines Weiterbildungsträgers

Norbert Hübner, Brigitte Kraemer-Farion,  
zebra e.V.

– eines bewährten Betriebs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Albert Wild, Arbeitshilfe des Caritas-  
verbandes für Stuttgart e.V.

– eines jungen Beschäftigungsunternehmens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Rolf Baumann, Neue Arbeit Thüringen e.V.

anschließend **Diskussion**

**16.00 Uhr**

**Vorbereitung der Arbeitsgruppen**

**18.00 Uhr**

gemeinsames Abendessen

**Freitag, 18. Februar 1994**

**9.00 Uhr**

Arbeitsgruppen

**Der Bedarf an Qualifizierung:**

**Erste Annäherung an ein neues Berufsbild**  
Arbeit in Kleingruppen unter der Anleitung  
von Moderatoren

Die Teilnehmer sollen mögliche Bildungsinhalte für eine Anleiterqualifizierung entwickeln.

Vorgeschlagen werden zwei ausgewählte Problembereiche:

**1. Prima Klima im Team – Die sozialen und kommunikativen Fähigkeiten der Anleiter**

**2. „Soziales Produkt“ und „Arbeitsprodukt“ – Anleiter zwischen sozialem Anspruch und ökonomischem Zwang**

**12.00 Uhr**

Mittagessen

**13.00 Uhr**

Auswertung der Ergebnisse aus den  
Arbeitsgruppen

**Ein Bildungsangebot für Anleiter – wie es aussehen könnte**

Referent:

Norbert Hübner, Brigitte Kraemer-Farion,  
zebra e.V.

**15.00 Uhr**

Ende der Veranstaltung

4

**Tagungsort:**

Bürgerhaus  
Mannheim-Neckarstadt  
Lutherstraße 15-17  
68169 Mannheim  
Telefon (0621) 31 59 56

**Termin:**

1.12. – 2.12.1993

**Teilnehmer:**

Die Anzahl der TeilnehmerInnen ist auf 50 Personen begrenzt.

**Kosten:**

100,- DM für Tagung und Verpflegung.  
Für TeilnehmerInn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gilt eine reduzierte Tagungsgebühr von 50,- DM.

**Unterbringung:**

Eine Übernachtung kann auf Wunsch vom Veranstalter organisiert werden. Die Kosten für Übernachtung tragen die TeilnehmerInnen.  
Die Übernachtungskosten für TeilnehmerInn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werden von der BAG Arbeit auf Antrag bis zu 120,- DM erstattet.

**Anmeldung:**

Bis zum 12.11.1993 bei BIOTOPIA e.V., Mannheim.  
Bitte benutzen Sie die beiliegende Anmeldekarte.

**Veranstalter:**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BIOTOPIA e.V.**

T 6, 37  
68161 Mannheim

**Chance gGmbH**

Darßer Straße 153  
13051 Berlin

**Rückfragen:**

Rückfragen richten Sie bitte an  
BIOTOPIA e.V., Telefon (0621) 15 43 11,  
Dr. Renate Breithecker-Amend  
oder a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in Berlin, Telefon (030) 283 29 51,  
Ellen-Ruth Schneider, Sabine Brinkman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wird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gefördert.

Die Veranstaltung „Frau und Beruf“ wird von  
der Daimler-Benz AG unterstützt.

Gestaltung: DESIGN 17, Berlin  
Gedruckt auf Recyclingpapier.

# FRAU UND BERUF – ZUR AKTUALITÄT DES GESPALTENEN ARBEITSMARKTES



ARBEIT  
KOORDINIERUNGS-  
STELLE OST-WEST



BIOTOPIA

FACHTAGUNG IN  
MANNHEIM AM  
1./2. DEZEMBER 1993

IN ZUSAMMENARBEIT  
MIT CHANCE gGmbH

## TAGUNGSZIELE

Frau und Beruf – dieses spannungsreiche Verhältnis steht im Mittelpunkt der Veranstaltung, die 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V. gemeinsam mit Biotopia e.V. und Chance gGmbH durchführt. Mit dieser Fachtagung wollen die Veranstalter der Frage nach den Ursachen für die Arbeitsmarktrisiken von Frauen nachgehen, die gegenwärtigen Entwicklungstendenzen kritisch beleuchten und gesell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 Positionen zur Verbesserung der Erwerbchancen von Frauen zur Diskussion stellen.

Die Erwerbstätigkeit von Frauen steht im Spannungsfeld von Wirtschaft, Politik, Arbeits- und Lebenswelt. In Arbeitsgruppen zu diesen Bereichen werden die jeweils spezifischen Probleme erörtert, bestehende Defizite herausgearbeitet und Lösungsvorschläge diskutiert. Die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in der Lebens- und Arbeitssituation von Frauen in den alten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bilden dabei einen besonderen Themenschwerpunkt.

Die Veranstaltung versteht sich ebenso als Beitrag zur Fortbildung wie als Forum für Erfahrungsaustausch, kritische Diskussion und Ideenentwicklung. Zusätzlich ist beabsichtigt, Forderungen an eine frauengerechte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k zu erarbeiten, die im abschließenden „Streitgespräch“ mit VertreterInnen und EntscheidungsträgerInnen aus den relevanten Politik- und Gesellschaftsbereichen diskutiert werden.

Alle Frauen und Männer, die die Arbeitsmarktpolitik für Frauen umsetzen und mitgestalten, sind herzlich eingeladen, an der Fachtagung teilzunehmen.

**BIOtopia – Verein für ökologische Arbeit und Ausbildung e.V.** führt seit 1986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projekte für besonders benachteiligte Menschen durch und verbindet dabei soziale mit ökologischen Zielsetzungen.

**CHANCE gGmbH – gemeinnützige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 für Frauen** in Berlin sucht, entwickelt und initiiert seit 1992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für Frauen in unterschiedlichen Bereichen. Ziel von Chance ist es dabei, arbeitsmarktpolitische Programme mit regionaler Wirtschafts- und Strukturpolitik enger zu verbinden.

Die **BAG Arbeit** ist die bundesweite Organisation von Beschäftigungsinitiativen und Arbeitsförderungsgesellschaften und repräsentiert mit ihren Einrichtungen den größten Teil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Ergänzungsmärkte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Biotopia und Chance gGmbH sind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 TAGUNGSPROGRAMM

**Mittwoch, 1. Dezember 1993**

bis 13.00 Uhr  
Anreise

13.00 Uhr  
Imbiß

14.00 Uhr  
**Begrüßung durch die Veranstalter**  
Ellen-Ruth Schneider, BAG Arbei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erlin  
Peter Kurz, BIOTOPIA e.V., Mannheim  
Renate Michalik-Erxleben, Chance gGmbH, Berlin

14.45 Uhr  
**Textcollage „Das Weib gehört ins Haus“**  
Eine Exkursion durch die männliche Gedankenwelt, vorgetragen von Schauspielerinnen des Frauentheaterprojektes der Chance gGmbH

anschließend Kaffeepause

15.30 Uhr  
Arbeitsgruppen  
**Aspekte von Frauenarbeit im Ost-West-Vergleich: Erfahrungsaustausch und kritische Bestandsaufnahme**  
**Arbeitsgruppe 1:**  
**Frauenbeschäftigung in „normalen“ Wirtschaftsbetrieben:**  
Karrierechancen und -barrieren für Frauen  
**Moderation:**  
Barbara Ohnsmann, Mercedes-Benz AG, Mannheim  
Dr. Brigitte Gumm, Chance gGmbH, Berlin

**Arbeitsgruppe 2:**  
**Sozialpolitische Rahmenbedingungen von Frauenbeschäftigung:**  
Frauen im Spannungsfeld wirtschafts- und sozialpolitischer Interessen  
**Moderation:**  
Yvette Bödecker, Stadträtin, Mannheim  
Petra Bläss, Unabhängiger Frauenverband, MdB, Berlin

**Arbeitsgruppe 3:**  
**Frauenprojekte in Sozialbetrieben:**  
Reproduktion einer „Problemgruppe“ oder Verbesserung der Integrationschancen?  
**Moderation:**

Rosemarie Rosenfeld, Kommunale ABS mbH der Hansestadt Rostock  
Sabine Heiligenthal, BIOTOPIA e.V., Mannheim

**Arbeitsgruppe 4:**  
**Familie – Umfeld – Lebenswelt:**  
Frauen zwischen Betrieb und Haushalt:  
Doppelte Belastung – halbierte Chancen  
**Moderation:**  
Veronika Schäfer, Internationaler Bund für Sozialarbeit, Offenbach  
Karin Steffan, Stadträtin, Mannheim

## TAGUNGSPROGRAMM

17.30 Uhr  
**Frauen auf dem Arbeitsmarkt: Unterschiedliche Risikolagen in Ost und West?**  
Präsentation der Zwischenergebnisse aus den Arbeitsgruppen

18.30 Uhr  
Gemeinsames Abendessen

20.30 Uhr  
Frauen-Rock-Abend im „Forum der Jugend“

**Donnerstag, 2. Dezember 1993**

9.00 Uhr  
**Präsentation des Frauenprojektes „Rollende Werkstatt“, BIOTOPIA e.V., Mannheim**

anschließend Kaffeepause

11.00 Uhr  
Fortsetzung der Arbeitsgruppen

13.00 Uhr  
Gemeinsames Mittagessen

14.00 Uhr  
**Forderungen an eine frauengerechte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k**  
Diskussion der Ergebnisse aus den Arbeitsgruppen; Vorbereitung des Streitgesprächs

anschließend Kaffeepause

15.30 Uhr  
**Frauen stellen Forderungen – Streitgespräch mit ExpertInnen und FunktionsträgerInnen aus Politik, Wirtschaft und Gesellschaft**

Evelyne Gebhardt, Arbeitsgemeinschaft sozialdemokratischer Frauen  
Matthias Schulze-Böing, Stadt Offenbach und BAG Arbeit  
Ingrid Köppe, Bündnis 90/Grüne (angefragt)  
Karin von Lüpke, Bundesanstalt für Arbeit  
Dr. Peter Philipp, Daimler-Benz AG, Stuttgart  
Gabi Schmitt, Deutscher Gewerkschaftsbund  
Dr. Renate Hellwig, CDU-Frauenunion, MdB  
Petra Bläss, Unabhängiger Frauenverband, MdB  
N.N., Verband Deutscher Unternehmerinnen

18.00 Uhr  
Ende der Veranstaltung

2

3

4

## Tagungsort

Erholungszentrum der Jugend, An der Dubrow 21,  
1608 Prieros, Tel.: 213

Das Erholungszentrum befindet sich in einer landschaftlich schönen und ruhigen Lage direkt am Hutsche See. Ein umfangreiches Waldgebiet mit dem Naturschutzgebiet Dubrow sowie die Dahme-Wasserstraße mit zahlreichen Seen und seenartigen Erweiterungen bilden das Umfeld.

Termin: 11.1.–12.1.1993

## Teilnehmer:

Die Anzahl der Teilnehmer ist auf 30 Personen begrenzt

## Kosten:

150,-DM für Tagung, Unterkunft und Vollverpflegung.

Für Teilnehmer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gilt eine reduzierte Tagungsgebühr von 40,-DM, eine weitere Ermäßigung sowie ein Zuschuß zu den Fahrtkosten ist im Einzelfall auf Anfrage möglich.

## Unterbringung:

Die Unterbringung erfolgt in Zwei- und Dreibettzimmern

## Anmeldung:

Bis 10. Dezember 1992 bei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Bitte benutzen Sie die beiliegende Anmeldekarte.

## Rückfragen:

Richten Sie bitte a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Tel.: (030) 281 08 65

Ellen-Ruth Schneider  
Hanswalter Bohlander

Die Tagung wird in Zusammenarbeit mit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der Bürogemeinschaft **BBJ Servis gGmbH** und **Neue Arbeit Saar gGmbH**, Potsdam, durchgeführt.

BAG Arbei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O-1054 Berlin  
Telefon: (030) 281 08 65

chlorfrei gebleichtes Papier

ZUKUNFT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 - EXISTENZSICHERUNG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BAG

A R B E I T

KOORDINIERUNGS-  
STELLE OST-WEST

FORTBILDUNGS-  
VERANSTALTUNG  
MIT ERFAHRUNGS-  
AUSTAUSCH

11.01.-12.01.93

IN PRIEROS/  
BRANDENBURG

## TAGUNGSZIELE

Die Arbeitsmarktkrise der achtziger Jahre hat in Westdeutschland zu einer Vielzahl von Initiativen im Bereich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geführt. Lokale Beschäftigungsprojekte haben sich als richtiger Ansatz zur Bekämpfung von Langzeitarbeitslosigkeit erwiesen. Sie verbinden inzwischen häufig Qualifizierung mit Beschäftigung und bieten derzeit in Westdeutschland Arbeitsplätze für rund 100 000 Menschen.

Mit den dramatischen Veränderungen des Arbeitsmarktes aufgrund des Wechsels des Wirtschaftssystems sind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Reihe von Beschäftigungsprojekten und -initiativen entstanden. Einige von ihnen haben sich inzwischen wieder aufgelöst, andere sind neu entstanden oder werden geplant. Gemeinsam ist diesen Projekten in der Regel die Finanzierung über ABM, die jedoch dauerhaft kein Überleben sichern kann. Nach der spontanen Anfangsphase ist es nun notwendig, die Finanzierungsbasis zu verbreitern, indem man geeignete Aufträge sucht, um die Projekte auch aus eigener Kraft in ihrer Existenz zu sichern.

Die BAG Arbeit als trägerübergreifende Fachorganisation lokaler Beschäftigungsinitiativen kann auf ein breites Informations- und Erfahrungswissen bzgl. Aufbau und Führung von Beschäftigungsprojekten zurückgreifen. Sie will mit dieser Tagung einen Beitrag leisten, die Existenz solcher Einrichtungen und Initiativen auf Dauer abzusichern.

Im Tagungsangebot ist sowohl die problemorientierte Vermittlung von Informationen und Fachwissen als auch die praxisnahe Arbeit in kleinen Gruppen enthalten. Referenten und Praktiker aus ost- und westdeutschen Sozialunternehmen werden ihre Kenntnisse und Erfahrungen mit einbringen.

Die Tagung richtet sich an:

- Mitarbeiter, die in unterschiedlichen Beschäftigungsprojekten tätig sind,
- Mitarbeiter, die in Wohlfahrtsverbänden, in kirchlichen und anderen Einrichtung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etc. Beschäftigungsprojekte durchführen oder planen.
- Träger entsprechender Projekte
- Initiatoren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n, die in der Planungs- oder Gründungsphase sind.
- Menschen, die arbeitslos sind oder denen Arbeitslosigkeit droht und die sich mit anderen zusammen ihren Arbeitsplatz selbst schaffen wollen.

## TAGUNGSABLAUF

**Montag, 11.1.93**

Anreise bis 10.00 Uhr

10.00 Uhr

### **Begrüßung und Einführung in die Tagung durch die Veranstalter**

Hansjörg Böhringer, Vorstandsvorsitzender der BAG Arbeit,  
Ellen-Ruth Schneider, BAG Arbei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Gisela Mehlmann, ESF Technische Hilfe Brandenburg

10.30 Uhr

### **Kommunale und lokale Strategien für Qualifizierung und Beschäftigung**

Podiumsdiskussion

Teilnehmer:

Olaf Sund,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Herr Corde, Arbeitsamtsdirektor Neuruppin

Herr Baaske, Dezernent für Bildung, Gesundheit, Soziales und Kultur, Kreis Belgig

Hansjörg Böhringer, Vorstandsvorsitzender der BAG Arbeit,

Moderation:

Dr. Manfred Zinbler, ESF Technische Hilfe Brandenburg

13.00 Uhr

Mittagessen

14.30 Uhr

### **Workshop**

### **Beispielhafte Erarbeitung von Problemlösungen in Beschäftigungsprojekten**

Kleingruppenarbeit unter der Anleitung von Moderatoren aus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Arbeitsgruppe I:

Schwerpunkt: Kommunale Verantwortlichkeit für Beschäftigung

Referentin:

Sabine Stroinski, Gesellschaft Beratung, Beschäftigungssicherung, Weiterbildung mbH, Berlin

## TAGUNGSABLAUF

Arbeitsgruppe II:  
Schwerpunkt: Kombination verschiedener Förderprogramme

Referent:

Gerd Tomaschautzky, Amt für Wirtschafts- und Beschäftigungsförderung, Bielefeld

Arbeitsgruppe III:

Schwerpunkt: Die Arbeit mit Zielgruppen (z.B. Jugendliche, Ausländer)

Referent:

Peter Mulschler, Internationaler Bund für Sozialarbeit, Berufsbildungsstätte Offenbach

18.00 Uhr

gemeinsames Abendessen

**Dienstag, 12.1.1993**

8.00 Uhr

### **Fortsetzung der Workshops**

10.00 Uhr

Kaffeepause

10.30 Uhr

Plenum

### **Ergebnisse aus den Arbeitsgruppen**

11.30

### **Schlußfolgerungen für Aufgaben und Funktion der Organisation lokaler Beschäftigungsinitiativen – Der Ansatz der BAG Arbeit**

Referent: Hansjörg Böhringer

Diskussion

Anforderungen und Erwartungen an die Ost-West Kooperation

13.00 Uhr Mittagessen / Ende der Tagung



Linie 6,  
Haltestelle Stallbaumstraße

ABW,  
Poetenweg 32 - 34

**BAG**  
ARBEIT

## Workshop

# "Konzeptentwicklung, Planung und Finanzierung von Beschäftigungsprojekten im Sozialbereich"

Veranstalter: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Arbeit e.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n Zusammenarbeit mit:

Beratungsstelle für  
arbeitsorientierte  
Strukturentwicklung  
in Sachsen e.V.

**BASIS**

**ABW**

Gesellschaft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Weiterbildung  
GB ORSTA-Beschäftigungsinitiative

zu erreichen:

ab Hauptbahnhof mit der Straßenbahnlinie 6 in Richtung  
Gohlis bis zur Haltestelle Stallbaumstraße (6. Haltestelle  
nach dem Hauptbahnhof)



AUFBAUWERK REGIERUNGSBEZIRK LEIPZIG GmbH i.G.

**Termin: 11. Mai 1993**

**Veranstaltungsort: ABW GmbH  
Poetenweg 32/34  
O-7022 Leipzig**

Eine Teilnahmegebühr wird nicht erhoben

Reisekosten und evtl. Übernachtungskosten sind von den Teilnehmern bzw. von den entsendenden Einrichtungen zu tragen.

**Wir bitten um Teilnahmebestätigung bis 4. 5. 1993**

an:

**BASIS e.V. Leipzig**

**Floßplatz 28**

**O-7010 Leipzig**

**Telefon: 0341/32 85 01 oder 32 85 15**

**Telefax: 0341/32 84 92**

DIE TEILNEHMER WERDEN GEBETEN, ZUR VORBEREITUNG DES WORKSHOPS BEREITS IDEEN FÜR MÖGLICHE BESCHÄFTIGUNGSFELDER ZU SAMMELN UND ALS WEITERE ARBEITSGRUNDLAGE, SOWEIT VERFÜGBAR, AUSGABEN-, FINANZ- BZW. WIRTSCHAFTSPÄNE - EVENTUELL IHRER EIGENEN EINRICHTUNGEN - MITZUBRINGEN.

### **Programmablauf:**

**8.00 Uhr Begrüßung durch die Veranstalter:**  
Ellen-Ruth Schneider, BAG Arbeit,  
Heidrun Kletzin, BASIS e.V.

#### **Vorstellung der Teilnehmer**

**8.30 Uhr Referat: Besondere Zielgruppen des Arbeitsmarktes und das Instrument "Hilfe zur Arbeit"**  
Referenten: Matthias Schulze-Böing, Michael Palkovich  
Diskussion

**9.30 Uhr Einführung in die Kleingruppenarbeit**  
Erläuterung der Aufgabenstellung und Methode:  
Michael Palkovich

**10.00 bis 14.30 Uhr Arbeit in drei Kleingruppen unter der Anleitung von Moderatoren**  
**"Planspiel": Von der Idee zur Verwirklichung eines sozialen Beschäftigungsprojektes**  
(dazwischen: Mittagsimbiss)

**14.30 Uhr Plenum zu Arbeitsgruppenergebnissen, Diskussion offener Fragen**

**15.30 Uhr Auswertung des Workshops**

**16.00 Uhr Ende der Veranstaltung**

**Moderatoren der Arbeitsgruppen:**  
Monika Wacker-Kemmer, Umweltwerkstatt der VHS  
Rheingau-Taunus,  
Michael Schulze-Böing, Referat für Beschäftigungsförderung,  
Stadt Offenbach/Main,  
Michael Palkovich, LAG "Soziale Brennpunkte" Hessen

## Organisatorisches

### Tagungsort:

Bildungsakademie Dresden  
Zwickauerstr. 46, 01069 Dresden  
Tel.: 0351 / 464730

### Termin:

30.10.1993

### Teilnehmer:

Die Veranstaltung richtet sich an Mitarbeiter des Sozialamtes, des Jugendamtes, des Amtes für Wirtschaftsförderung, des Arbeitsamtes, von Beschäftigungs- und Arbeitsförderungsgesellschaften, der Stadtliga der Wohlfahrtsverbände sowie anderer Maßnahmeträger zur Arbeits- und Beschäftigungsförderung in Dresden. Die Anzahl der Teilnehmer ist auf 40 Personen begrenzt

### Kosten:

Teilnahmegebühr entfällt. Die Kosten tragen die Veranstalter.

### Veranstalter: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Arbeit e.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Tel.: 030 / 283 2951 Fax: 030 / 283 2952

in Zusammenarbeit mit der

Qualifizierungs- und Arbeitsförderungsgesellschaft Dresden mbH  
Friedrichstr. 57, 01067 Dresden  
Tel.: 0351 / 494245

### Rückfragen:

Rückfragen richten Sie bitte an die QAD  
Brigitte Knebel, Tel.: 0351 / 281 00 13  
oder a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llen-Ruth Schneider, Tel: 030 / 283 29 51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wird durch den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gefördert.

# QAD

# BAG

A R B E I T

## Einladung

### "Hilfe zur Arbeit" als integrierter Prozess von Beratung, Orientierung, Beschäftigung und Vermittlung

Planung, Finanzierung und Umsetzung der "Hilfe zur Arbeit" (HzA) gemäß §§ 18-20 BSHG in der Landeshauptstadt Dresden.

## Seminar

der BAG Arbei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n Zusammenarbeit mit der  
Qualifizierungs- und Arbeitsförderungsgesellschaft Dresden (QAD)

am 30. Oktober 1993 in Dresden

"Hilfe zur Arbeit" gewinnt auch in den neuen Ländern zunehmend an Bedeutung als Instrument kommunaler Sozial- und Arbeitsmarktpolitik. Die Landeshauptstadt Dresden will HzA Maßnahmen durchführen und dabei mit bestehenden Initiativen und arbeitsmarktpolitischen Einrichtungen zusammenarbeiten. Bei dem Seminar geht es darum, umsetzungsbezogene Schritte des Aufbaus und der Kooperation zwischen Kommunalverwaltung, freien Trägern und der Arbeitsverwaltung zu erarbeiten, um zu einem abgestimmten Konzept der schnellen Einführung dieses Instrumentes zu kommen.

## Programmablauf

8.30 Uhr

### **Begrüßung**

Roland Nitsche, Geschäftsführer der Qualifizierungs- und Arbeitsförderungsgesellschaft Dresden mbH (QAD)

8.45 Uhr

Einführung in das Seminar

### **Besondere Anforderungen an die Träger bei der Beschäftigung von Sozialhilfeempfängern nach §§ 19-20 BSHG**

Matthias Schulze-Böing, Referat für Arbeitsförderung der Stadt Offenbach a.M., Mitglied des geschäftsführenden Vorstandes der BAG Arbeit

9.15 Uhr

### **Beratung und Orientierung im Rahmen von "Hilfe zur Arbeit"**

Aufgaben, Inhalte und Ziele von Beratung und Orientierung

Maria Kutsch, Gemeinnützige Offenbacher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gesellschaft mbH (GOAB)

9.45 Uhr

### **Teilnehmerplatzierung und verwaltungsinterne Umsetzung der "Hilfe zur Arbeit"**

Charlotte Buri, Referat für Arbeitsförderung der Stadt Offenbach a.M.

10.15 Uhr

Kaffeepause

## Programmablauf

10.30 Uhr

### **Brücke in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 Erfahrungen mit der Vermittlungshilfe im Rahmen von HzA-Maßnahmen**

Dr. Klaus Enders, Werkstatt Frankfurt, Frankfurt a.M.

11.15 Uhr

### **Folgerungen für die Qualifikationsanforderungen an Mitarbeiter in Trägereinrichtungen von HzA-Maßnahmen**

Matthias Schulze-Böing, Referat für Arbeitsförderung der Stadt Offenbach a.M.

12.00 Uhr Mittagessen

13.00 Uhr

Arbeitsgruppen zur

### **"Hilfe zur Arbeit" als integrierter Prozess von Beratung, Orientierung, Beschäftigung, Qualifizierung und Vermittlung.**

Übungen an Fallbeispielen unter Anleitung von Moderatoren aus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dazwischen Kaffeepause

16.00 Uhr

gemeinsame Auswertung des Seminars

16.30 Uhr

Ende der Veranstaltung

문서 번호 39

"처음에 거절 당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세요"

1994 년 3 월 12 일/1995 년 9 월 28 일자

담당자 / 기관: 매르키셰 오데르차이퉁(Märkische Oderzeitung)/미텔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내용:

이 문서는 1990 년 중반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구동독의 주민을 위해 지역신문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기 신문 독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전략에 자문해 주는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다. 자문에 동원된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 주었다. 이 기사를 통해 당시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다.

출처: Zeitungsausschnitt der Märkischen Oderzeitung vom  
12.03.1994/Zeitungsausschnitt der Mitteldeutschen Zeitung vom 28.09.1995.



Fachleute gaben Auskunft zur Berufsausbildung:

# Nach ersten Absagen die Flinte nicht gleich ins Korn werfen, sondern Alternativen überlegen

re Telefon-  
e Telefone  
n lang fast  
e Experten  
Arendt von  
es Arbeits-  
Ulrich Leh-  
- und Han-  
/Oder, Pe-  
landwerks-  
r und Ga-  
Außenstelle  
teriums für  
war keine  
rmel schüt-  
inweise  
genden bzw.  
men kann,  
sbildung zu  
r wiesen die  
aß die jun-  
Alternativen  
Traumbe-  
t.



**Gabriele Löbert** gab u. a. Auskunft zur Beamtenlaufbahn.



**Berufsalternativen.** Darüber nachzudenken rieten Martin Lau, Birgit Arendt und Peter Drämel (v. l. n. r.) einigen Anrufern. MO/Fotos Köhler



**Ulrich Lehmann** informierte u. a. über Berufe in der Industrie.

glichen  
einen Aus-  
?

auch im Einzelfall berät. Die Entscheidung über die Ausbildungsbe-  
rechtigung trifft das Ministerium für  
Wirtschaft, Mittelstand und Techno-  
logie in Potsdam.

## Welche Möglichkeiten einer Förderung gibt es für Auszubildende?

Wenn der Auszubildende während  
der Ausbildung außerhalb der Wohn-  
ung seiner Eltern wohnt, kann er  
Berufsausbildungsbeihilfe (BAB) be-  
antragen. Je nach Einkommen seiner  
Eltern und den Kosten für Unterkunft  
und Anfahrtsweg wird diese BAB in-  
dividuell berechnet. Informationen,  
Beratung und Anträge für BAB er-  
hält man bei der Berufsberatung des  
Heimatarbeitsamtes.

## Selbstständig bei Firmen bewerben

Mein Sohn macht jetzt den Real-  
schulabschluss und möchte Ein-  
strieckaufmann werden. Wie sollte  
er vorgehen?

Er sollte sich rechtzeitig bei der  
Abteilung Berufsberatung im  
Arbeitsamt melden. Darüber hinaus  
sollte er sich auch selbstständig bei  
Firmen bewerben. Um herauszufin-  
den, welche Betriebe dafür in Frage  
kommen, kann man u. a. die Gelben  
Seiten zu Rate ziehen. Da es auch in  
diesem Beruf mehr Nachfragen als  
Stellen gibt, sollte sich Ihr Sohn be-  
rufliche Alternativen überlegen. Im  
Berufsinformationszentrum kann  
man testen, welche unentdeckten  
Fähigkeiten Ihr Sohn hat. Es besteht  
auch die Möglichkeit, sich in den al-  
ten Bundesländern zu bewerben.

## Ich möchte gerne zum Zoll. Wo- hin muß ich mich wenden, und welche Voraussetzungen muß man haben?

Interessenten aus dem Land Bran-  
denburg müssen sich mit ihrer Be-  
werbung an die Oberfinanzdirektion  
Cottbus, Zoll und Verbrauchsteuer-  
abteilung, Großbeerstraße 341 bis  
345 in 14480 Potsdam wenden. Sie  
müssen mindestens 17 Jahre, gesund  
und sportlich sein.

## Meine Tochter möchte Zahn- technikerin oder Augenoptikerin werden. Wie groß sind die Chan- cen?

## Ich möchte Kfz-Schlosser wer- den. Ist auch eine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mögl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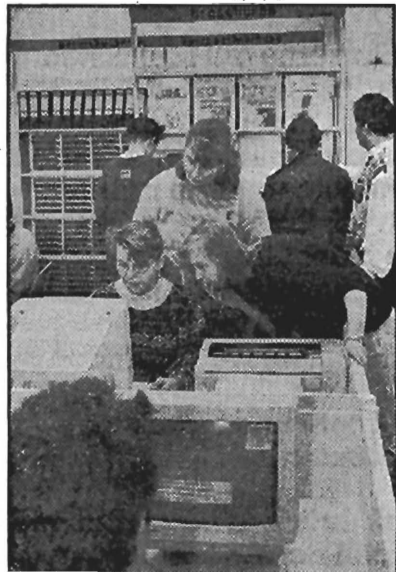
Nein. Da nach wie vor sehr viele  
Jugendliche Kfz-Mechaniker werden  
wollen und nur wenige Ausbildungs-  
plätze zur Verfügung stehen, sollten  
Sie überlegen, ob nicht ein artver-  
wandter Beruf in Frage kommt. Zum  
Beispiel könnten die Ausbildungs-  
plätze zum Anlagenmechaniker oder  
Schlosser im vergangenen Jahr nicht  
alle besetzt werden. Viele Betriebe  
in der Metallindustrie können ihren  
Auszubildenden auch nach dem  
Lehrabschluss eine Beschäftigungs-  
garantie anbieten, was in vielen an-  
deren Berufen leider nicht selbstver-  
ständlich ist.

## Mein Sohn möchte Uhrmacher werden. Wo muß er sich hinwen- den?

Er kann sich an die Berufsbera-  
tung im Arbeitsamt wenden, um in  
die Vermittlung aufgenommen zu  
werden. Allerdings gibt es sehr we-  
nige Ausbildungsplätze als Uhma-  
cher. Auch die Handwerkskammer  
kann Auskunft geben, ob Uhrmacher  
in unserer Region Lehrlinge suchen.

## Beratung für Rehabilitanden

Mein Sohn will Einzelhandels-  
kaufmann werden. Er hat die  
Scheuermannsche Krankheit und  
wurde von der Abteilung Berufs-  
beratung zum ärztlichen Dienst



## geschickt. Was sollen wir jetzt un- ternehmen?

Es ist ratsam, sich mit der Berufs-  
beratung in Verbindung zu setzen.  
Die Berufsberater für Rehabilitation  
sind in der Lage, sehr individuell auf  
die Belange Ihres Sohnes einzugehen  
und ihm bei der Suche eines Ausbil-  
dungsplatzes behilflich zu sein.

## Ich würde gerne Maurer werden, aber mein Halbjahreszeugnis der 10. Klasse ist nicht gut. Habe ich eine Chance?

Selbstverständlich ist es günstiger,  
sich mit einem guten Zeugnis zu be-  
werben. Vorteilhaft ist, wenn Sie  
sich selbst in Betrieben vorstellen,  
damit man dort von Ihnen einen Ein-  
druck gewinnt. Ein Zeugnis sagt da  
nicht so viel aus, wichtig sind auch  
praktische Fähigkeiten und das eige-  
ne Wollen.

## Wie lange dauert die Ausbildung bei der Polizei?

Die Ausbildung vollzieht sich in  
drei Abschnitten und geht zwei Jahre  
und sechs Monate. Als Polizeivoll-  
zugsbeamter beginnt dann die eigen-  
verantwortliche Tätigkeit in einer  
Polizeidienststelle. Nähere Auskünfte  
erteilt Ihnen die Landespolizeischule  
Brandenburg, Werbe- und Auswahl-  
dienst, Prenzlauer Str. 66 - 70,  
16352 Basdorf, Tel. 03301/883456.

## Muß ich die Kosten selbst tra- gen, wenn ich zu einem Bewer- bungsgespräch eingeladen werde?

Grundsätzlich ist der zum Bewer-  
bungsgespräch einladende Betrieb  
zur Zahlung der entstandenen Kosten  
angehalten. Erstattet der Betrieb die-  
se Kosten nicht, können Jugendliche,  
die bei der Berufsberatung als Aus-  
bildungsstellenbewerber gemeldet  
sind, unter bestimmten Vorausset-  
zungen die Vorstellungskosten vom  
Arbeitsamt erstattet bekommen. In-  
formationen und Anträge erhalten Sie  
über die Abteilung Berufsberatung.

## Leistungsschwache werden gefördert

Mein Sohn hat große schulische  
Probleme. Damit hat er ster-  
kaum Chancen, eine Lehrstelle  
bekommen. Was wird mit ihm

schiedene Berufsbilder vorgestellt,  
u. a. im Bau- und Metallbereich. Er  
könnte danach eine dreijährige Be-  
rufsausbildung aufnehmen.

## Unser Sohn besucht eine private Handelsschule. Gibt es dafür För- dermöglichkeiten?

Die schulische Ausbildung kann  
vom Arbeitsamt grundsätzlich nicht  
gefördert werden. Ihr Sohn sollte  
einen BAföG-Antrag stellen, und außer-  
dem sollten Sie sich in der Schule  
selbst noch einmal erkundigen, ob es  
Förderungen gibt. Generell ist jedoch  
zu sagen: Wer eine private Schule  
auswählt, muß auch für die damit ver-  
bundenen Schulkosten aufkommen.

## Ich möchte Hotelfachfrau wer- den, aber man sagte mir, in der näheren Umgebung ist die Aussicht auf einen Ausbildungsplatz sehr ge- ring. Könnte ich den Beruf auch in den alten Bundesländern lernen?

Ja, das wäre möglich. Die Ar-  
beitsämter haben hierfür eine ganze  
Reihe Angebote. Überlegen sollten  
Sie aber auch, ob Sie die Trennung  
von zu Hause verkraften und sich in  
einer fremden Umgebung relativ  
leicht eingewöhnen können. Es wäre  
nämlich schade, wenn Sie später die  
Lehre aus solchen Gründen abbre-  
chen würden.

## Vermittlungsauftrag ans Arbeitsamt

## Ich bin niedergelassener Arzt und möchte eine Arzthelferin aus- bilden. Was muß ich tun?

Sie stellen einen Vermittlungsauf-  
trag an das zuständige Arbeitsamt.  
Dort können Sie auch Ihre Wünsche  
angeben (Schulabschluss u. ä.). Das  
Arbeitsamt vermittelt Ihnen dann  
mehrere Jugendliche, und Sie können  
entscheiden, wen Sie letztendlich  
ausbilden möchten.

## Ich wohne in der Nähe von Eberswalde und würde gern in der Holzbranche lernen. Gibt es da Möglichkeiten?

Am 15. März findet in der Stadt-  
verwaltung Eberswalde eine Ausbil-  
dungsbörse statt. Dort stellen sich ne-  
ben Arbeitsamt, Industrie- und Han-  
delskammer und Handwerkskammer

## Kontaktadressen

Arbeitsamt Frankfurt/Oder  
Abteilung Berufsberatung  
Birnbäumühle 65,  
15236 Frankfurt/Oder,  
Tel.: (0335)/334719  
(auch zuständig für  
Seelow und  
Bad Freienwalde)

Nebenstellen:  
15890 Eisenhüttenstadt,  
Friedrich-Engels-Str. 40  
Tel.: (03364)/530

15517 Fürstenwalde  
(auch zuständig für Beeskow),  
Karl-Marx-Straße,  
Tel.: (03361)/61 01

15344 Strausberg,  
Wriezener Str. 28,  
Tel.: (03341)/510

Arbeitsamt Eberswalde  
Abt. Berufsberatung  
Schicklerstr. 14-20  
16225 Eberswalde  
Tel.: (03334)/67 406

Nebenstellen:  
16321 Bernau  
Schwanebecker Ch. 8  
Tel.: (03338)/68 15

17291 Prenzlau  
(auch zuständig für Templin),  
Wilhelm-Pieck-Str. 91  
Tel.: (03984)/6025/6029

16303 Schwedt  
Am Stadtbad 2  
Tel.: (03332)/2734/2735

nung feststellen kann. Dana-  
wurde ihr gesagt, daß ihr Ausb-  
dungsplatz zu 90 Prozent sich  
sei. Gleichzeitig kam die Frage,  
sie auch am darauffolgenden  
Samstag arbeiten würde, ohne Be-  
zahlung. Ist das legitim?

Es ist legitim, daß der Arbeitgeber  
die Eignung prüft. Ein zweimaliger  
Einsatz müßte dazu ausreichend sein.  
Dann muß sich das Hotel entschei-  
den. Ihre Tochter sollte jetzt dar-  
drängen, daß ein Ausbildungsvertr  
abgeschlossen wird.

## Nachwuchsmangel im Bäckerhandwerk

Ich wäre dafür, daß mein Sol-  
einen handwerklichen Beruf er-  
lernt, doch er kann sich daran  
nicht recht anfreunden ...

Das erleben wir leider immer wi-  
der. Jugendliche haben oftmals Vor-  
behalte gegen Berufe wie Fleisch-  
Bäcker u. v. a., doch gerade hier ma-  
gelt es an Nachwuchs, und die Aus-  
bildungschancen sind gut. Sie soll-  
ten noch einmal mit Ihrem Sohn spre-  
chen und die Berufsberatung aufsuche.  
Darüber hinaus gibt es die Möglic-  
keit, sich Informationen bei der  
Handwerkskammer und den Kre-  
s handwerkerschaften einzuholen.

## Meine Tochter macht jetzt ihr Zehnklassenabschluß und möch- t Kinderpsychologin oder Kinde- gärtnerin werden. Welche Ausb- dung braucht sie dafür?

Um Kinderpsychologin zu werde-  
müßte Ihre Tochter erst das Abit  
ablegen und dann studieren. Den B-  
ruf Kindergärtnerin gibt es als so-  
chen nicht mehr. Jetzt gibt es eine  
Ausbildung zur staatlich anerkannten  
Erzieherin, die für die Betreuung von  
Kindern im Alter von 0 bis 18 Jahr  
ausgebildet wird. Sie umfaßt eine  
zweijährige Ausbildung in einer B-  
ruffachschule und anschließend eine  
dreijährige schulische Ausbildung  
mit Praktika in verschiedenen Ki-  
dereinrichtungen. Während dieser  
Ausbildungszeit kann man BAföG  
beantragen.

Das Berufsinformationszentrum  
(BIZ) des Arbeitsamtes Frank-  
furt/Oder, Birnbäumühle 65,  
15236 Frankfurt/Oder



Gabriele Löbert, Bundesministerin für Wirtschaft  
Volker Becherer, Abteilungsleiter, Handwerkskammer Halle  
Ingeborg Kuhne, Geschäftsführerin, IHK Halle-Deessau  
Martina Scherer, Abteilungsleiterin im Arbeitsamt Halle

Halle 20 21679 / 20 26155

Nicht jeder darf ausbilden

**DORIS S. (42), KELLNERIN:**  
Unser Sohn hat bereits eine Lehrstelle, er will als Montagebauer werden. Aber es gibt ein Problem: Der Ausbilder ist Industriemeister, nicht Handwerksmeister. Nun wurde uns gesagt, braucht eine Sondergenehmigung der Handwerkskammer, um Lehrge ausbilden zu können. Jetzt drängt die Zeit. Kann es für meinen Sohn Schwierigkeiten geben?

Wahrscheinlich nicht. Aber natürlich müssen die entsprechenden Bestimmungen eingehalten werden. In der Regel ist es so, daß Industriemeister die Ausbildungsberechtigung bekommt, wenn lange genug im Beruf tätig waren. Wenden Sie sich bitte an die ständige Handwerkskammer und erkundigen Sie sich, ob schon eine Entscheidung getroffen wurde. Die zuständige Handwerkskammer wird Ihnen die zuständige Handwerkskammer mitteilen.

**GISELA J. (45), ANGESTELLTE:**  
Mein Sohn hat noch keine Lehrstelle. Er interessiert sich für den kaufmännischen Bereich, ist sich aber über seine Vorkenntnisse nicht so recht im klaren. Wo kann er sich hinwenden?

Setzen Sie sich umgehend mit der Abteilung Berufsberatung in Verbindung und nutzen Sie die Informationsmöglichkeiten im Berufsberatungszentrum des Arbeitsamtes. Wenn es nicht gleich mit einer Vermittlung klappt, setzen Sie nicht aufgeben. Es ist wichtig, den Kontakt aufrecht zu halten. Wenn Ihr Sohn meint, daß das Richtige gefunden hat, sollten Sie bedenken, daß der einzige Bewerber ist - also schnell handeln.

**MARION F. (15), SCHÜLERIN:**  
Ich möchte mich rechtzeitig um eine Lehrstelle bemühen. Unter anderem würde ich gern wissen, ob es bestimmte Modalitäten gibt, wie man sich bewirbt und welche Unterlagen eingereicht werden müssen. Wohin kann ich mich mit meinen Fragen wenden?

Es ist gut, wenn Sie sich schon heute um solche Fragen kümmern. Sie können im Berufsberatungszentrum des Arbeitsamtes entsprechende Materialien erhalten. Es gibt dort kostenloses Heftchen, in dem alles enthalten ist, was man wissen muß, sowie was die Form als auch den Inhalt betrifft.

**KARIN A. (40), ANGESTELLTE:**  
Meine Tochter besucht die 10. Klasse. Nun wollen wir im nächsten Jahr in die alten Länder ziehen. Wohin kann man sich schon jetzt wegen einer Lehrstelle wenden? Wir möchten nämlich nicht Zeitdruck geraten.

Diese Gefahr besteht nicht. Es gibt verschiedene Möglichkeiten. Entweder Sie wenden sich an die zuständige Arbeitsamt. Wenn Sie bereits wissen, welche Interessen die Tochter hat, kann man schon Empfehlungen für die Ausbildung in der Gegend geben, die Sie ziehen. Die Arbeitsämter von allen Ländern stehen Ihnen einander in Verbindung. Sie können aber ebenso bestimmen, von Ihnen in die engere Wahl zuzugewogene Betriebe im neuen Wohnort ansprechen.

**SYLVIA N. (39), VERKÄUFERIN:**  
Mein Sohn absolviert zur Zeit das Berufsgrundjahrgang. Nun kann es sein, daß er jetzt noch eine Lehrstelle bekommt. Die Schule behauptet aber, daß er nur bis Ende Oktober die Schule verlassen könnte. Hat das seine Richtigkeit?

Nein, wenn Ihr Sohn einen Beruf findet, der ihn ausbildet, kann er natürlich sofort wechseln. Das ist ganz gleich, wann im Jahr das ist. Aber eine Absprache mit der Berufsschule ist auf jeden Fall sinnvoll und notwendig.

Berufsausbildung

An das Arbeitsamt oder direkt an Betriebe wenden

Experten antworten auf Leserfragen - Von Absagen nicht gleich entmutigen lassen - Informationen über den Computer

**HILMAR K. (35), ARBEITER:**  
Mein Sohn besucht die 10. Klasse und hat den Wunsch, Fliesenleger zu werden. Er hat sich bereits in einem Betrieb beworben und dort die Schulpraktika absolviert. Nun wurde ein Schaden an der Wirbelsäule festgestellt, so daß er diesen Beruf nicht ausüben darf. Er soll möglichst einen sitzenden Beruf erlernen. Wer kann uns da weiterhelfen?

Sie sollten sich unbedingt beim Arbeitsamt melden, denn von dort werden Lehrstellen für Bewerber mit körperlichen Schäden gesondert vermittelt. Ihr Sohn kann sich aber auch ganz normal in Betrieben für eine leichte Arbeit selbst bewerben. Es gibt Möglichkeiten vom Bauzeichner bis zum Buchhändler. Er hat ja noch genügend Zeit, sich zu informieren und einen entsprechenden Betrieb auszusuchen, bei dem er sich dann bewirbt.

gibt, helfen Gespräche mit dem Berufsberater weiter.

**SILVIA S. (35), KRANKENSCHWESTER:**  
Im nächsten Jahr schließt unser Sohn die Schule mit der 12. Klasse ab. Welche Berufsmöglichkeiten bieten sich ihm? Er hat noch keine richtigen Vorstellungen, aber handwerklich ist er nicht begabt.

Als Abiturient kann man mit einer betrieblichen Ausbildung durchaus die Studienchancen verbessern. Bestimmte Richtungen setzen dies sogar voraus. Über bestehende Möglichkeiten sollte er ausführlich mit der Berufsberatung sprechen.

sie sich wenden, denn sie wird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zu uns ziehen?

Altenpflege ist eine schulische Ausbildung, die in Halle von verschiedenen Einrichtungen durchgeführt wird. Zu den Voraussetzungen gehören entweder der Realschulabschluß und eine einjährige Berufsfachschule oder ein Hauptschulabschluß und eine zweijährige Berufsausbildung im sozialen Bereich.

Ihre Schwiegertochter könnte aber auch eine dreijährige pflegerische Tätigkeit nachweisen. Sie sollte doch einmal die Berufsberatung in ihrem neuen Heimatort aufsuchen, um den für sie geeignetsten Weg zu finden.

und die Winterprüfung. Man muß dem Jugendlichen natürlich Zeit geben, bestimmte Dinge, die er nicht beherrscht hat, zu vertiefen oder sich anzueignen. Dafür ist laut Gesellenprüfungsordnung ein Zeitraum von mindestens drei Monaten vorgegeben. Unterhalb dieser Grenze wäre es gar nicht möglich, die vorhandenen Defizite auszugleichen.

**SIMONE F. (16), SCHÜLERIN:**  
Kann ich mich als Frau auch für den Beruf des Kfz-Mechanikers bewerben?

Ja, natürlich. Wir machen sogar die Erfahrung, daß Frauen gern genommen werden, weil sie nach Abschluß der Ausbildung häufig besonders viel Erfolg im Verkauf



MZ-Zeichnung: Jürgen Tomicek

**DOROTHEA S. (39), ANGESTELLTE:**  
Meine Tochter lernt jetzt in der neunten Klasse. Wie sehen die Chancen aus, wenn sie Kindergärtnerin oder Erzieherin werden möchte? Sollte sie jetzt schon etwas unternehmen?

Bei den Berufen im sozialen Bereich, Kinderpfleger und Erzieher, erfolgt eine schulische Ausbildung. Ihre Tochter benötigt entweder den Haupt- oder für den Erzieherberuf den Realschulabschluß. Gemeinsam mit der Tochter sollten Sie sich beim Berufsberater erkundigen, wo die Ausbildung erfolgen kann, wann und wie eine Bewerbung abgeschickt wird.

**ERIKA F. (45), VERKÄUFERIN:**  
Mein Sohn wird im nächsten Jahr sein Abitur ableisten. Danach möchte er studieren. Nun haben wir gehört, daß er laut Gesetz verpflichtet ist, vorher seinen Wehrdienst zu leisten. Stimmt das? Bleibt ihm, wenn er bereits einen Ausbildungsplatz hat, die Stelle erhalten, bis er den Wehrdienst absolviert hat?

Grundsätzlich werden Abiturienten zum Juli beziehungsweise Oktober nach dem Abitur einberufen. Das ist auch sinnvoll, damit der Lehrling nicht seine Ausbildung mittendrin unterbrechen muß. Es gibt natürlich immer Ausnahmen, zum Beispiel im Krankheitsfall. Auf jeden Fall sollten Sie sich bei Unklarheiten beim Kreiswehrersatzamt einmal genau erkundigen.

**ELLEN B. (41), HAUSFRAU:**  
Meine Tochter möchte gern Rettungssanitäterin werden. Wo muß sie sich dafür bewerben?

Die Ausbildung erfolgt an der Schule für Brand- und Katastrophenschutz in Heyrothsberge. Unter der Rufnummer 03929 2013 erhalten Sie nähere Auskünfte.

**HORST L. (49), UNTERNEHMER:**  
Ich habe im vergangenen Jahr einen Lehrling etwas verspätet eingestellt, weil ich erst die Zulassung zur Lehrausbildung bekommen habe. Nun haben wir keine Fördermittel bekommen, da der Termin überschritten war. Gibt es noch eine Möglichkeit, an das Geld zu kommen?

Nein, die Richtlinie dazu sagt eindeutig, daß vier Wochen vor

**HEINZ S. (63), RENTNER:**  
Mein Enkelsohn hatte einen Lehrbetrieb gefunden, der ihn zum Tischler ausbilden wollte. Kurz vor Abschluß des Vertrages ging der Betrieb pleite. Mein Enkel sucht nun wieder eine Lehrstelle. Das Kuriose aber ist, daß die komplett eingerichtete Werkstatt nun nicht mehr genutzt wird. Gibt es denn gar keine Möglichkeit, so eine Einrichtung zu erhalten?

Man sollte noch einmal mit dem neuen Eigentümer sprechen. Es gibt jetzt im Land Sachsen-Anhalt auch Fördermittel für eine sogenannte Verbundausbildung. Diese beinhaltet, daß ausbildungsfähige Betriebe sich mit solchen zu einer Kooperation zusammenschließen, die nicht voll ausbildungsfähig sind. So können Ausbildungsressourcen aktiviert werden, die ein Einzelbetrieb nicht erschließen kann. Auf diese Weise wäre viel-

haben. Die Betriebe müssen allerdings Auflagen erfüllen, wie beispielsweise für eine Damentoilette, bzw. Damenumkleideräume sorgen. Daran sollte ein Ausbildungsverhältnis jedoch nicht scheitern. Wir hatten auch schon den Fall, daß ein Mädchen dem Betrieb angeboten hat, schon in Arbeitskleidung morgens in den Betrieb zu kommen.

**LARS I. (14), SCHÜLER:**  
Immer wieder hört man von mangelnden Ausbildungsplätzen. Soll ich mich jetzt schon um eine Lehrstelle für 1996 kümmern?

Grundsätzlich gilt: Je eher man sich kümmert, um so besser. Wenn Sie noch gar nicht wissen, was sie werden wollen, dann haben Sie jetzt noch genügend Zeit, sich über die verschiedenen Berufsfelder zu informieren. Ausbildungsverträge für 1996 werden in der Regel noch

**MARTINA S. (34), ANGESTELLTE:**  
Ab wann sollten die Jugendlichen mit der Suche einer Lehrstelle beginnen, und wo können sie sich informieren, welche Berufe überhaupt zur Auswahl ste-

...



문서 번호 40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4 년 [발췌]

1994 년 4 월

담당자 / 기관: 연방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4 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 년에 신연방주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었다. 사업체 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연방정부의 공동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수공업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독지역에서는 대단위 산업지역의 사업체 내 직업교육 공급이 축소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은 일반 교육부문이나 대학교 교육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에 더욱 발전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Hrsg.). 1994.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Nr. 40.

Berufsbildungsbericht 1994. Bad Honnef: K.H. Bock Verlag



Schriftenreihe  
Grundlagen und Perspektiven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40

# **Berufsbildungsbericht 1994**

Bonn 1994

Herausgegeben vo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Beschluß des Bundeskabinetts zum Berufsbildungsbericht 1994 vom 13. April 1994

Das Bundeskabinett nimmt den Berufsbildungsbericht 1994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zustimmend zur Kenntnis und stellt dazu folgendes fest:

1. In den neuen Ländern wurde auch 1993 eine ausgeglichene Ausbildungsplatzbilanz erreicht. Dies ist ein gemeinsamer Erfolg von Wirtschaft, Bund und neuen Ländern. Eine weitere deutliche Steigerung des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angebotes, insbesondere im Handwerk, hat dazu ebenso beigetragen wie die ergänzende Förderung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durch die Gemeinschaftsinitiative des Bundes, der neuen Länder und Berlins, mitfinanziert aus Mitteln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1994 sind weiter erhebliche Anstrengungen aller Beteiligten erforderlich. Ziel muß ein betriebliches Ausbildungsangebot für alle Ausbildungsplatzbewerber sein.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ist beauftragt, den Ausbildungsstellenmarkt in den neuen Ländern fortlaufend zu beobachten und dem Bundeskabinett spätestens bis zum 1. Juli 1994 darüber zu berichten.

2. In den alten Ländern ist insbesondere in großen Industriebetrieben das Ausbildungsplatzangebot zurückgegangen. Trotz eines insgesamt nach wie vor hohen Angebotsüberhangs gibt es vereinzelt erstmals seit Jahren regionale Angebotsengpässe.

Alle Prognosen gehen davon aus, daß zukünftig mehr beruflich ausgebildete Fachkräfte gebraucht werden, um den Standortvorteil Qualifikation zu sichern. Es wird deshalb

nachhaltig davor gewarnt, di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auf Grund konjunktureller Entwicklungen an kurzfristigen Kostenüberlegungen und Personalplanungen zu orientieren. Die Wirtschaft bleibt aufgefordert, im eigenen Interesse allen Ausbildungsplatzbewerbern einen Ausbildungsplatz anzubieten.

3. Damit die hohe Beteiligung junger Menschen an der dualen Berufsausbildung auch in Zukunft gesichert bleibt, müssen die Berufsbildungsangebote differenzierter und weitere Schritte zur Gleichwertigkeit beruflicher und allgemeiner Bildung unternommen werden.

Die Berufsbildung muß als Alternative zu allgemeinen Bildungswegen und Hochschulstudium attraktiver werden. Dazu müssen in erster Linie Betriebe und Verwaltungen beruflich ausgebildeten Fachkräften chancenreiche Berufsperspektiven bieten. Aber auch die Angebote beruflicher Aus- und Weiterbildung müssen weiterentwickelt und ergänzt werden, damit den Erwartungen leistungsfähiger junger Menschen an Bildung und berufliche Entwicklungschancen sowie d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beim Zugang zu mittleren und gehobenen Berufspositionen entsprochen werden kann.

Die besondere Förderung Jugendlicher, die sonst ohne Berufsausbildung bleiben würden, sowie die Nachqualifizierung von jungen Erwachsenen bleiben weiterhin wichtige Aufgaben und müssen weiter entwickelt werden. Bei Neuordnungsarbeiten muß sichergestellt werden, daß alle Jugendlichen Zugang zu einem breiten Spektrum von Ausbildungsberufen haben.

문서 번호 41

각 연방주 내 계속교육정책 [신연방주 관련내용 발췌]

1994 년 6 월

담당자 / 기관: 독일 시민대학교연맹(DVV) 내 교육담당부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계속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의 모음집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브란덴부르크주 내 계속교육의 법적 토대는 연방주 헌법과 계속교육법(BbgWBG)이다.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은 33 조에서 계속교육진흥 의무 외에도, 자유운영주체의 계속교육기관을 설치할 권리 및 직업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계속교육 기간 중 근무면제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계속교육법은 이와는 달리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의 실시와 같은 계속교육의 진흥을 목표로 한다. 그를 통해 시장정책적 위기상황의 타개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계속교육 조치에 대한 기본적 지원은 1994 년도 및 1995 년도에 약 40,000 명의 주민 당 2,400 시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1996 년도에 이 비율은 30,000 명 당 2,400 시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적 지원을 위한 (총 비용이 전체 490 만 마르크에 달하는) 인적·물적 비용의 50 퍼센트는 연방주가 부담한다. 브란덴부르크 주 계속교육법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연간 620 만 마르크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1996 년도 부터는 총 지원금액이 약 830 만 마르크로 증가해야 한다.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금액은 소액에 해당한다.

다른 연방주들의 상황을 보면 주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작센주의 경우 계속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 작센주는 계속교육기회의 제공을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직업계속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논문들은 모두 직업계속교육의 현재 수요와 관련하여, 또는 그외 정치적 혹은 문화적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급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Report.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Nr. 33, Juni 1994



# **REPORT 33**

**LITERATUR- UND FORSCHUNGSREPORT  
WEITERBILDUNG  
JUNI 1994**

**THEMA:  
WEITERBILDUNGSPOLITIK IN DEN  
BUNDESLÄNDERN**

## Inhaltsverzeichnis

Editorial ..... 9

### **WEITERBILDUNGSPOLITIK IN DEN BUNDESLÄNDERN ..... 11**

*Ekkehard Nuissl*

Weiterbildungspolitik in den Bundesländern ..... 13

*Herbert Moser*

Weiterbildung in Baden-Württemberg ..... 19

*Rudolf Tippelt*

Weiterbildung in Baden-Württemberg ..... 21

*Dieter Hirt*

Erwachsenenbildung in Bayern ..... 27

*Hans-Georg Löbl/Karl Weberpals*

Weiterbildungspolitik in Bayern ..... 31

*Monika Londner-Kujath*

Weiterbildungspolitik in Berlin ..... 35

*Bernhard Dieckmann*

Weiterbildungspolitik in Berlin ..... 40

*Eva-Maria Bosch*

Zur aktuellen Situation der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 44

*Ulrike Enders*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m Land Brandenburg ..... 50

*Claus Schroer*

Grundzüge der Weiterbildungspolitik in Bremen ..... 55

*Detlef Kuhlenkamp*

Zur weiterbildungspolitischen Situation im Lande Bremen ..... 61

*Christoph Ehmann*

Weiterbildung in Hamburg ..... 68

*Gerhard Strunk*

Zur Hamburger Weiterbildungspolitik ..... 74



<i>Hans-Martin Schreiber/Eberhard Scheler</i>	
Erwachsenenbildung in Hessen .....	81
<i>Peter Faulstich</i>	
Erwachsenenbildung in Hessen .....	84

<i>Neithart Neitzel</i>	
Weiterbildung in Mecklenburg-Vorpommern .....	89
<i>Wolfram Knöchel</i>	
Weiterbildungspolitik in Mecklenburg-Vorpommern .....	93

<i>Jürgen Castendyk</i>	
Erwachsenenbildung in Niedersachsen .....	98
<i>Horst Siebert</i>	
Erwachsenenbildung in Niedersachsen – ein Perspektivenwechsel .....	104

<i>Manfred Dammeyer</i>	
Weiterbildung in Nordrhein-Westfalen .....	107
<i>Georg Behse/Peter Ch. Neu</i>	
Weiterbildung in Nordrhein-Westfalen .....	111

<i>Peter Krug</i>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n Rheinland-Pfalz .....	117
<i>Rolf Arnold/Burkhard Lehmann</i>	
Weiterbildung in Rheinland-Pfalz .....	121

<i>Klaus Bernarding</i>	
Weiterbildung im Saarland .....	129
<i>Detlef Oppermann</i>	
Weiterbildung im Saarland .....	132

<i>Arnfried Schlosser</i>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m Freistaat Sachsen .....	137
<i>Thomas Friedrich</i>	
Sächsisches Weiterbildungsgesetz in weiter Ferne? .....	139

<i>Reiner Schomburg</i>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m Land Sachsen-Anhalt .....	143
<i>Armin-Ekke Moeller</i>	
Weiterbildungspolitik im Land Sachsen-Anhalt .....	147

<i>Gisela Böhrk</i>	
Weiterbildungspolitik in Schleswig-Holstein .....	153
<i>Hans Rüdiger</i>	
Zur weiterbildungspolitischen Situation in Schleswig-Holstein .....	155

<i>Klaus-Dieter Steinmetz</i>	
Erwachsenenbildung im Freistaat Thüringen .....	163
<i>Eberhard Zickler</i>	
Die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n Thüringen .....	165

<b>REZENSIONEN</b> .....	171
<b>DAS BUCH IN DER DISKUSSION</b> .....	173
Gerhard Schulze: Die Erlebnisgesellschaft (Johannes Weinberg, Peter Faulstich, Klaus-Peter Hufer, Hans Tietgens)	
<b>SAMMELBESPRECHUNGEN</b> .....	182
Berufliche Bildung: Personalpraxis und Organisationsentwicklung (Peter Faulstich)	
Ältere Menschen und Medienarbeit (Richard Stang)	
Bemühen um die Bildung Älterer (Hans Tietgens)	
<b>BESPRECHUNGEN</b> .....	189
Herbert Becker: Stoffülle und Stoffreduktion in der Weiterbildung (Hans Tietgens)	
Karin Derichs-Kunstmann/Brigitte Müthing (Hrsg.): Frauen lernen anders (Hannelore Faulstich-Wieland)	
Wiltrud Gieseke (Hrsg.): Feministische Bildung – Frauenbildung (Hannelore Faulstich-Wieland)	
Hermann Glaser/Thomas Rübke (Hrsg.): Dem Alter einen Sinn geben (Jürgen Dege)	
Herbert Hertramph/Carmen Stadelhofer (Hrsg.): Alternativen (Jürgen Dege)	
Ekkehard Nuissl/Hans-Joachim Schuldt: Betrieb statt Behörde (Ernst Küchler)	
Wolfgang Seitter: Volksbildung und Educación popular (Wolfgang Jütte)	
<b>KURZINFORMATIONEN</b> .....	200
<b>Autoren/-innen</b> .....	221

## **Zur aktuellen Situation der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Di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

### **1. Das Gesetz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 Brandenburgisches Weiterbildungsgesetz (BbgWBG)**

#### **1.1 Grundlagen**

Die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garantiert nicht nur in Artikel 29 ein allgemeines Recht auf Bildung, sondern weist ausdrücklich der Weiterbildung in Artikel 33 Verfassungsrang zu. Verankert ist neben dem Gebot, Weiterbildung „durch das Land, die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zu fördern“, das „Recht auf Errichtung vo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Absatz 2 des Artikels 33 schreibt „das Recht auf Freistellung zur beruflichen, kulturellen o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fest.

Die Regierungserklärung des Ministerpräsidenten (12/90) und die Vereinbarung der Koalitionsregierung unterstreichen ebenfalls den hohen Stellenwert, welcher der Weiterbildung im Land eingeräumt wird.

#### **1.2 Eckpunkte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Am 17. Dezember 1993 verabschiedete der Brandenburgische Landtag in zweiter Lesung das „Gesetz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Der Verabschiedung sind insbesondere im politischen Raum und auf der Ebene der Verbände aufwendige und kontroverse Diskussionen um den Stellenwert der Bildungsfreistellung vorausgegangen.

Wie überal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 ist auch in Brandenburg der Beitrag, den Weiterbildung im Rahmen der Transformationsprozesse auf der Ebene der beruflichen Qualifikation, der politischen Demokratisierung und der Bewältigung persönlicher Umbruch- und Krisensituationen leistet, prinzipiell unumstritten; die Dominanz beruflicher Weiterbildung, als Praxis d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ist allerdings unübersehbar, wenn auch aufgrund der veränderten Förderpraxis Abschwächungen erkennbar werden. Von daher ist die Sicherung der nicht allein auf die berufliche Existenz gerichteten Inhaltsbereiche der allgemeinen, der politischen und 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in besonderem Maße geboten.

##### **1.2.1 Recht auf Weiterbildung**

§ 2 des Gesetzes verankert das Recht auf Weiterbildung als Bestandteil des Grundrechts der freien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unabhängig von Geschlecht, Alter, Bildung, sozialer oder beruflicher Stellung, Nationalität und politischer oder

weltanschaulicher Orientierung. Die Wahrnehmung dieses Rechts durch eine möglichst große Anzahl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liegt im wohlverstandenen Interesse des Landes und dient dem Gemeinwohl, d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der Wirtschaft sowie der Steigerung persönlicher Lebensqualität gleichermaßen.

Ein Grundrecht auf Weiterbildung nach Wunsch, aus dem sich ein Anspruch auf Organisation und Förderung von Weiterbildung nach individuellen Wünschen und Fähigkeiten ableiten ließe, ist jedoch nicht impliziert.

### **1.2.2 Verpflichtung der Kreise zur Sicherung der Grundversorgung**

Die nach der Gebietsreform im Dezember 1993 neu gebildeten 14 Kreise und 4 kreisfreien Städte sind per Gesetz gemäß §§ 5 und 6 zur Sicherung der Grundversorgung verpflichtet.

Die Verpflichtung zur Grundversorgung ist einerseits durch die Flächenstruktur des Landes Brandenburg begründet, das bei einer Größe von ca. 30.000 qkm von rund 2,6 Millionen Menschen bewohnt wird. Bis Ende des Jahres 1993 war der Trend zur Konzentration der Weiterbildungsaktivitäten auf den städtischen Bereich ausgeprägt. Zum anderen wurde das Weiterbildungsgesetz parallel zur Gebietsreform und den damit verbundenen Konsequenzen der Funktionalreform diskutiert. Insbesonder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in kommunaler Trägerschaft fürchteten ohne eine gesetzliche Verpflichtung der Kreise und kreisfreien Städte zur Grundversorgung um ihren Bestand.

Aus fachpolitischer Sicht bewegt sich der zunächst vereinbarte, per Rechtsverordnung zu fixierende Schlüssel zur Grundversorgung auf minimaler Ebene und charakterisiert die gesetzliche Regelung als ‚Einstiegslösung‘: Gemäß Kabinettsbeschluss vom April 1993 beläuft sich der Schlüssel für die Grundversorgung in den Jahren 1994 und 1995 zunächst auf 2.400 Stunden je 40.000 Einwohner und steigt 1996 auf die Relation 2.400 zu 30.000. Der Grundversorgungsschlüssel beschreibt den Umfang der den kommunalen Gebietskörperschaften übertragenen pflichtigen Selbstverwaltungsaufgabe und den Förderumfang durch das Land. Es wird davon ausgegangen, daß Kreise und kreisfreie Städte in eigener Verantwortung ein darüber hinausgehendes, bedarfsorientiertes Weiterbildungsangebot vorhalten. Die Akquisition zusätzlicher Mittel ist möglich und sicher notwendig. Aus der Verfassung leitet sich die qualitative Definition des Grundversorgungsangebots ab; sie umfaßt die Bereiche der allgemeinen, beruflichen, kulturellen und politischen Weiterbildung. Die allgemeine Problematik der Definition der aufgeführten Inhaltsbereiche gehört zu den die Fachdiskussion stets begleitenden Themen und erfordert auch in Brandenburg im Zusammenhang der Anforderungen, die die Umsetzung des Gesetzes mit sich bringt, eine sachgerechte Normierung in einer ergänzenden Verwaltungsvorschrift. Die fachpolitische Zielsetzung der Integration der Themenbereiche findet sich im Gesetz wieder. Im Vergleich gesetzlicher Regelungen ist auf die Einbeziehung 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hinzuweisen, die den Bereich der (westlichen) Fremdsprachen – mit hoher Priorität – umfaßt.

### **1.2.3 Berücksichtigung der Trägervielfalt bei der Durchführung der Grundversorgung**

§ 5 legt in Abs. 1 des Gesetzes fest, daß Kreise und kreisfreie Städte bei der Durchführung der Grundversorgung die Trägervielfalt berücksichtigen müssen. Die kommunalen Gebietskörperschaften sind in ihrer Entscheidung über die Trägerkonstellationen, die die Grundversorgung in ihrem Gebiet sichern, frei. Der Gesetzgeber hat mit dieser Regelung das Bekenntnis der Verfassung zur Pluralität der Träger konsequent umgesetzt und damit eine für die Bundesrepublik völlig neue Regelung geschaffen. Weiterbildungsinteressentinnen und -interessenten nach den Erfahrungen des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Bildungssystems reale Wahlmöglichkeiten zwischen Angeboten unterschiedlicher Träger zu garantieren, war für diese Entscheidung ausschlaggebend. Erfahrungen mit der Umsetzung dieser Regelungen stehen bislang aus.

## **1.3 Kooperation und Koordination**

### **1.3.1 Regionale Kooperation und Koordination**

Vom Land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sind per Gesetz zur Mitarbeit in einem Regionalen Weiterbildungsbeirat verpflichtet. Die Konzeption der Regionalen Weiterbildungsbeiräte geht davon aus, daß gemeinsames, aufeinander abgestimmtes Handeln erfolgversprechender und leistungswirksamer ist als isoliertes Handeln. Das Zusammenwirken der im Kreisgebiet tätigen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soll im Interesse der Bildungsadressaten erfolgen, die auch bei begrenzten Rahmenbedingungen unter einem möglichst breiten und qualitativ zufriedenstellenden Angebot wählen können.

Das Zusammenwirken in einem solchen Gremium stellt die Vertretung der beteiligten Einrichtungen vor besondere Kooperationsanforderungen, doch sind die Chancen, eine der regionalen Besonderheiten angepaßte aktive Weiterbildungsentwicklungsplanung zu betreiben und zu praktizieren, außerordentlich günstig. Die Eigenständigkeit der Einrichtungen und ihre Programmfreiheit sind gewährleistet.

Die Aufgaben der Regionalen Weiterbildungsbeiräte, die durch Landräte und Oberbürgermeister einberufen werden, und ihre Zusammensetzung ergeben sich aus den §§ 10 und 11. Neben der Ermittlung des regionalen Bedarfs sollen die Weiterbildungsbeiräte u.a. auf die Sicherung einer bedarfsgerechten Grundversorgung und Maßnahmen der Bildungswerbung und -beratung hinwirken; zu den wesentlichen Aufgaben dieses Gremiums gehört es auch, Vorschläge für die Verteilung der Mittel zur Förderung der Grundversorgung zu unterbreiten. Die Entscheidung über die Mittelvergabe trifft das Gremium dagegen nicht.

Die Tragfähigkeit der Konzeption dieses regionalen Kooperationsgremiums wird sich in der Praxis beweisen müssen; flankierende Supportstrukturen werden insbesondere von wissenschaftlicher Seite sowie durch das Pädagogische Landesinstitut entwickelt.

### **1.3.2 Kooperation auf Landesebene**

Wie in den gesetzlichen Regelungen der meisten anderen Bundesländer sieht auch das Brandenburgische Weiterbildungsgesetz in § 12 einen Landesbeirat für Weiterbildung vor, der die Landesregierung in grundsätzlichen Fragen der Weiterbildung und ihrer finanziellen Förderung beraten soll.

Die Zusammenarbeit der Vertretungen in diesem Gremium und des Beirates mit der Landesregierung soll den auf Kooperation und Koordination angelegten Ansatz des Gesetzes konsequent stärken.

Im Rahmen der Anerkennung von Einrichtungen, aber auch von Maßnahmen der Bildungsfreistellung kommt dem Landesbeirat eine besondere Aufgabe zu.

### **1.4 Bildungsfreistellung**

Die Regelung zur Bildungsfreistellung hat im Vorfeld der Verabschiedung des Gesetzes zu heftigen, kontroversen Diskussionen geführt; die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bekannten und trotz des Beschlusse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5.12.1987 strapazierten Argumente gegen das Recht der Arbeitnehmer auf Bildungsfreistellung bei Entgeltfortzahlung prägten die Debatten im Detail ebenso wie die Forderung nach der Verdoppelung des Umfangs der Freistellung, der in der Bundesrepublik üblicherweise fünf Werktage pro Kalenderjahr beträgt.

Mit Rücksicht auf die wirtschaftliche Situation des Landes, insbesondere der Klein- und Mittelbetriebe, wurde ein Kompromiß erarbeitet, der zur Verabschiedung der Bildungsfreistellung führte mit der Maßgabe, diesen Teil des Gesetzes (§§ 14 ff.) erst zum 1.1.1996 in Kraft zu setzen.

Ab 1996 wird die Brandenburgische Arbeitnehmerschaft einen Rechtsanspruch auf Bildungsfreistellung zum Zwecke beruflicher, politischer und kultureller Weiterbildung im Umfang von 10 Arbeitstagen innerhalb eines Zeitraums von zwei aufeinanderfolgenden Kalenderjahren haben. Die Regelungen zur Bildungsfreistellung lehnen sich aufgrund des gemeinsamen Wirtschaftsraums wesentlich an das Berliner Bildungsurlaubsgesetz an; der Schutz für Kleinbetriebe ist jedoch in Brandenburg stärker ausgeprägt; Kinderbetreuung ist durch die Heimbildungsstätten sicherzustellen.

Der Gesetzgeber hat von der in anderen Ländern üblichen Praxis der Anerkennungsfiktion Abstand genommen, so daß ab 1996 jede Maßnahme zur Bildungsfreistellung vom zuständigen Ministerium anzuerkennen ist.

### **1.5 Förderung**

Zur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auf der Grundlage des Gesetzes stehen zunächst rund 6,2 Millionen DM jährlich zur Verfügung; vom Jahre 1996 an erhöht sich die Gesamtfördersumme auf ca. 8,3 Millionen DM.

Das ist angesichts der in den Haushalten anderer Bundesländer eingestellten Mittel

vergleichsweise bescheiden. Pro Kopf der Bevölkerung wird die Weiterbildung auf gesetzlicher Grundlage mit 2,39 DM gefördert. Den Einrichtungen und Trägern wird viel organisatorisches Geschick abverlangt. Zusätzliche Mittelbeschaffung wird die Regel sein. Doch darf bei aller Kritik im Land nicht vergessen werden, daß die Verfassung neben dem Land auch die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mit der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beauftragt. Zudem sind Weiterbildungsmittel in teilweise erheblichem Umfang auch in anderen Ressorts eingestellt; erwähnt seien beispielhaft die Bereiche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oder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as Gesetz stellt in § 27 die Förderung unter den üblichen Haushaltsvorbehalt und verweist in Abs. 4 auf die Festlegung der Einzelregelungen in einer Rechtsverordnung. Diese befindet sich z.Zt. in Abstimmungsprozessen, so daß an dieser Stelle lediglich Eckpunkte zu benennen sind.

### **1.5.1 Förderung der Grundversorgung**

Das Land fördert die zu erbringende Grundversorgung durch anteilige Erstattung der Personal- und Sachkosten im Gesamtumfang von 4,9 Millionen DM. Diese Gesamtsumme setzt sich in der Kalkulation zusammen aus Kosten für haupt- und nebenberufliches Personal sowie Sachkosten.

Den Abstimmungen zufolge werden pro 2.400 erbrachter Weiterbildungsstunden die Kosten für eine hauptberufliche pädagogische Kraft zu 50 % vom Land gefördert; die Honorarkosten zur Durchführung der Grundversorgung werden ebenfalls zu 50 % bezuschußt, wobei 30,00 DM für die Honorarkosten pro Weiterbildungsstunde angenommen werden. Die Sachkostenpauschale beträgt insgesamt 12,5 % der gesamten Personalkosten.

Die Mittel zur Durchführung der Grundversorgung sollen den Kreisen und kreisfreien Städten zweckgebunden zugewiesen und von diesen verwaltet werden.

### **1.5.2 Sonstige Förderung nach § 27**

Zur Förderung anerkannter Heimbildungsstätten, anerkannter Landesorganisationen und Modellvorhaben mit aktueller Schwerpunktsetzung stehen insgesamt Mittel in Höhe von 1,3 Millionen DM in den Jahren 1994 und 1995 zur Verfügung.

Die Rechtsverordnung, die exakte Richtlinien der Förderung beinhaltet, ist in der ersten Jahreshälfte 1994 zu erwarten. Im Vorfeld wurden die Eckpunkte der Modalitäten der Förderung mit Vertretern der kommunalen und freien Träger intensiv diskutiert.

Anerkannte Landesorganisationen und Heimbildungsstätten sollen leistungsgebundene Projektförderung für Personal- und Sachkosten erhalten.

Die Förderung von Modellvorhaben mit aktueller Schwerpunktsetzung richtet sich ebenfalls nach den Bestimmungen der Rechtsverordnung. Auch Einrichtungen, die nach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nicht anerkannt sind, können diese Förderung beantragen.

Generell gilt die Trennung von Anerkennung und Förderung.

### **1.5.3 Förderung des Pädagogischen Landesinstituts Brandenburg**

Gemäß § 4 Abs. 2 ist es die Aufgabe der obersten Landesbehörden und ihrer nachgeordneten Behörden und Einrichtungen, die Arbeit der nach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anerkannten Einrichtungen zu unterstützen. Das Pädagogische Landesinstitut Brandenburg (PLIB) ist daher mit einer Abteilung „Weiterbildung“ ausgestattet, zu deren Aufgabe insbesondere die Weiterbildung der Weiterbildner sowie die fachliche Förderung und Begleitung von Modellversuchen in der Weiterbildung zählen.

### **1.5.4 Zweiter Bildungsweg**

§ 2 des Weiterbildungsgesetzes regelt in Abs. 4 Belange des Zweiten Bildungsweges, sofern er von kommunale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oder 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getragen wird.

Für die Durchführung von Bildungsgängen zur Erlangung mittlerer Schulabschlüsse sowie der allgemeinen Hochschulzugangsberechtigung stehen landesbedienstete Lehrkräfte zur Verfügung; im Rahmen des allgemeinen Schullastenausgleichs erhält der Schulträger zweckgebundene Zuweisungen; für die Studierenden besteht Schulgeldfreiheit.

## **1.6 Allgemeines**

Das Gesetz enthält keine ausdrücklichen Regelungen zur Qualitätssicherung der Weiterbildung sowie zum Aufbau von Weiterbildungsberatung.

Die Prozesse der Qualitätssicherung sollen zunächst jenseits gesetzlicher Regelungen durch gezielte Qualifikation der Weiterbildner sowie Maßnahmen freiwilliger Selbstkontrolle eingeleitet werden. Die Anerkennungsregelungen in § 7 des Gesetzes unterstützen die Prozesse der Qualitätssicherung.

Weiterbildungsberatung wird dagegen bereits intensiv durch Beratungsstellen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praktiziert. Eine Ausweitung auf die nichtberuflichen Bereiche der Weiterbildung ist vorgesehen.

Mit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bekennt sich das Land zur öffentlichen Verantwortung für die Weiterbildung. Es bekräftigt den Stellenwert der Weiterbildung von Erwachsenen als eines selbständigen Bildungsbereichs und regelt die staatliche Förderungspraxis. Mit zunehmender Stabilisierung des Haushalts und der Wirtschaft sind Nachbesserungen im finanziellen Bereich wünschenswert.



##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m Land Brandenburg**

Für die Träger und insbesondere di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von Erwachsenen im Land Brandenburg sind im Jahr 1993 zwei neue, wesentliche Rahmenbedingungen geschaffen worden: Zum einen gilt seit dem 6. Dezember 1993 die neue Gliederung des Landes in 14 Großkreise und 4 kreisfreie Städte; zum anderen ist seit dem 16. Dezember 1993 das Gesetz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 das Brandenburgische Weiterbildungsgesetz – in Kraft.

Aus beiden gesetzlichen Regelungen erwachsen umfangreiche Anpassungs- und Umstrukturierungsprozesse, auf die sich di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einstellen müssen und dies auch bereits tun. Zugleich liegen darin Möglichkeiten, diese neuen Strukturen für die Weiterbildung zu nutzen. Denn aus der Spezifik des Landes Brandenburg ergeben sich für die Weiterbildung ebenso spezifische Aufgaben wie Anforderungen.

### **1. Wirtschaftliche, demographische und strukturelle Rahmenbedingungen**

Das Land Brandenburg ist gekennzeichnet durch eine geringe Bevölkerungszahl bei zugleich großer flächenmäßiger Ausdehnung. Knapp 2,6 Mio. Menschen leben auf einer Fläche von ca. 30.000 qkm; große Teile des Landes – beispielsweise die Uckermark oder die Prignitz – sind als strukturschwache ländliche Räume zu betrachten. Um die Wirtschaftskraft in den attraktiven Ansiedlungsräumen des sogenannten Speckgürtels um Berlin auch in die entfernteren Winkel des Landes ausstrahlen zu lassen, wurde das Land wie eine Torte mit Berlin in der Mitte in fünf große Wirtschaftszonen eingeteilt. Die neuen Großkreise fügen sich weitgehend in diese Struktur, so daß in ihnen Regionen mit unterschiedlicher Besiedlungsdichte und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vereint sind. Mittels des Konzeptes der dezentralen Konzentration sollen wirtschaftsstarke Regionen auch fern der Hauptstadt gefördert werden.

Die Umstrukturierung der bisher 38 Landkreise und 6 kreisfreien Städte in 14 Großkreise und 4 kreisfreie Städte betrifft insbesondere die Volkshochschulen. Für sie ergibt sich die Notwendigkeit, die Frage der Trägerschaft durch Kommune, Kreis oder z.B. auch einen Zweckverband zu klären. Mehrere ehemals selbständige Volkshochschulen werden zusammengefaßt: Nur eine Einrichtung bleibt als Hauptstelle bestehen, die anderen werden zu Nebenstellen. Dieser Prozeß verläuft verständlicherweise nicht ohne Konflikte. Kürzungen des hauptberuflichen Personals, eine Konzentration in der neuen Kreisstadt und eine geringere Bürgernähe werden befürchtet. In einigen Kreisen ist diese Umstrukturierung auf der formalen Ebene schon abgeschlossen. Daß die Anpassung an veränderte Strukturen auch die

Offenheit gegenüber Kooperationen und neuen Konzepten fördert, zeigt sich bereits in sehr ansprechenden Veranstaltungsprogrammen.

## **2. Das Spektrum der Träger und Einrichtungen, der Angebote und Landesorganisationen**

Im Land Brandenburg hat sich in den vergangenen vier Jahren eine vielgestaltige, aber noch längst nicht überschaubare oder gar festgefügte Weiterbildungslandschaft entwickelt. Sie setzt sich zusammen aus den Volkshochschulen und Heimbildungsstätten, den Einrichtungen der Urania und der Ländlichen Erwachsenenbildung (LEB), der Gewerkschaften wie der Arbeitgeberseite und einer Vielzahl anderer freier Träger. Das Spektrum der Weiterbildungsangebote ist bei den klassischen Volkshochschulprogrammen sehr breit, i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gibt es eine starke Spezialisierung, die freien Träger haben unterschiedliche Schwerpunkte in der politischen und kulturellen, der wissenschaftlichen und der allgemeinen Weiterbildung. Zahlreiche Projekte arbeiten im ökologischen, kulturellen, Frauen- und Selbsthilfebereich; sie haben neue Erwerbsmöglichkeiten geschaffen und sind sich oft gar nicht bewußt, daß ihre Arbeit Weiterbildungsarbeit ist.

Insbesondere Angebote 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erfordern nicht nur Fingerspitzengefühl, sondern auch besondere Anstrengungen bei der Weckung des Interesses. Die Bereitschaft, sich auf politische Themen, auf eine Auseinandersetzung mit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einzulassen und sich in der Folge auch einzumischen, ist wie in den anderen jungen Bundesländern sehr gering.

Dies gilt auch für die Frauenbildung. Obwohl sich durch die veränderte gesellschaftliche Definition der Frauenrolle und durch das drastische Ausmaß von Frauenarbeitslosigkeit das Leben der Frauen in Ostdeutschland grundlegend und viel stärker als das der Männer verändert hat, werden Angebote zu Frauenthemen oder speziell für Frauen nur zögernd angenommen. Daß Weiterbildung die Auseinandersetzung mit diesen Veränderungen und die Gestaltung des eigenen Lebens unterstützen kann, ist angesichts der sozialen Situation schwer vermittelbar. Die Resonanz auf Angebote der Frauenbildung wächst stetig, aber langsam; auch hier ist langer Atem nötig.

Zusammenschlüsse der Einrichtungen zur Vertretung ihrer Interessen existieren auf Landesebene in Form des Brandenburgi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der Landesarbeitsgemeinschaft politische Bildung (LAG) und der Interessengemeinschaft soziokulturelle Bildung. Di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der Kirchen, der Gewerkschaften, der Unternehmen und Kammern, die Ländliche Erwachsenenbildung, die Urania und andere werden von ihren Landesverbänden, häufig noch von Berlin aus, vertreten. Im Zuge der Umsetzung des Weiterbildungsgesetzes in die Praxis werden die einzelnen Einrichtungen und Träger jeweils für ihren Wirkungsbereich eine starke Interessenvertretung im Land Brandenburg aufbauen und sich zu handlungs- und anererkennungsfähigen Landesorganisationen zusammenschließen müssen. Die finanzielle Förderung einer Landesorganisation wird ein Mindestangebot in den

vertretenen Einrichtungen voraussetzen, so daß der Zwang zu Kooperation und Zusammenschlüssen gegeben ist.

### **3. Aufgaben von Weiterbildung in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Wie in allen neuen Bundesländern wurde in Brandenburg die Weiterbildungslandschaft durch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sche Maßnahmen, insbesondere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geprägt. Träger und Einrichtungen der außerbetrieblichen, beruflichen Weiterbildung dominieren. Die Novellierung des AFG führt auch in Brandenburg zu einer Reduzierung der kommerziellen und nichtkommerziellen Einrichtungen und ihrer Angebote, insbesondere wenn diese sich ausschließlich auf AFG-Maßnahmen konzentriert haben.

Unabhängig von dieser Entwicklung müssen sich jedoch alle in der Weiterbildung Tätigen mit den Zielen und Perspektiven von Weiterbildung kritisch auseinandersetzen. So nachvollziehbar die Fixierung auf einen Arbeitsplatz insbesondere vor dem Hintergrund eines bisher verbrieften Rechtes auf Arbeit ist, so sehr ist das Mittel Weiterbildung bei der Lösung dieses gesellschaftlichen Problems überfordert. Die Gefahr sollte nicht unterschätzt werden, daß mit einer zu engen Ausrichtung von Weiterbildung auf ihre berufliche Verwertbarkeit und mit einer „Qualifizierung auf Vorrat“ Hoffnungen enttäuscht und Motivationen zerstört werden. Die Schwierigkeiten vieler Weiterbildungseinrichtungen, auf ihre Angebote eine ausreichende Resonanz zu finden, entstehen nicht nur durch eine Skepsis z.B. gegenüber neuen Inhalten von Weiterbildung, sondern auch durch die Frage, wozu Weiterbildung dienen kann, wenn sie doch nicht zu einem Arbeitsplatz führt. Die Bedeutung von Weiterbildung darf daher nicht nur durch ihre Verwertbarkeit auf dem Arbeitsmarkt bestimmt werden, wodurch außerdem zahlreiche Personengruppen ausgeschlossen würden. Die Aufgabe von Weiterbildung liegt auch darin, Menschen unabhängig von Erwerbsarbeit zur Lebensgestaltung und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zu befähigen.

Besonders deutlich zeigt sich die Notwendigkeit eines Umdenkens, wenn es um die Frage geht, was Weiterbildung in den ländlichen Gebieten Brandenburgs bewirken kann. Zwei Drittel der Bevölkerung des Landes wohnen in Kleinstädten und Dörfern. Der Zusammenbruch der ländlichen Produktionsstrukturen hat zu einer drastischen Reduzierung der 1989 noch 180.000 Arbeitsplätze auf gegenwärtig ca. 39.000 geführt. Die Kompensation dieses Arbeitsplatzabbaus durch den Aufbau anderer Wirtschaftszweige ist äußerst schwierig und nur langfristig zu lösen.

Aus einer weiteren Spezifik des Landes Brandenburg entstehen interessante Aufgaben für die Weiterbildung – aus seiner Nähe zu Polen: die Vermittlung osteuropäischer Sprachen als soziale Kompetenz oder Begegnungsveranstaltungen mit deutschen und polnischen TeilnehmerInnen.

#### 4. Kooperation und Support-Strukturen

Kooperationen zu schaffen ist eine vordringliche Aufgabe für die Akteure der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 nicht nur aus Gründen der vom Weiterbildungsgesetz vorgegebenen Strukturen. Weiterbildung muß ihre Themen aus der regionalen Situation entwickeln: Berufliche Weiterbildung muß auf regional sinnvolle und zukunftsträchtige Berufsfelder vorbereiten, Angebote der übrigen Bereiche der Weiterbildung müssen sich am Bedarf, an den Interessen der dortigen Bevölkerung und an den regionalspezifischen Themen orientieren. Weiterbildung muß insbesondere in schwach strukturierten ländlichen Gebieten zur regionalen Entwicklung beitragen. Die besonderen Bedingungen, z.B. weite Wege und kleine Zielgruppen, erfordern andere Arbeitsweisen in Projekten und Kooperationen. Für di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bedeutet dies, sie müssen sich – im eigenen Interesse – füreinander öffnen und dürfen nicht aus inhaltlichen und materiellen Gründen auf einer Abgrenzung bestehen.

In den regionalen Weiterbildungsbeiräten, die in jedem Kreis zu bilden sind, werden alle anerkannte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des Kreises versammelt sein. Mit der Verteilung finanzieller Mittel ist die Analyse des regionalen Bedarfes verbunden. Darüber hinaus ist dieses Gremium nutzbar, um Transparenz über die Einrichtungen und ihre Angebote und damit auch über die vorhandene Konkurrenz herzustellen. Statt ähnlicher Angebote für dieselbe kleine Zielgruppe können Abstimmungen über die Programmgestaltung erfolgen, so daß statt konkurrierender und eventuell ausfallender Angebote wechselseitige Ergänzungen möglich sind.

Aufgrund der Situation der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ist die Beratung der Einrichtungen zwingend geboten. Träg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brauchen hier Unterstützung bei der Konzeption von Angeboten und der Einschätzung des Weiterbildungsbedarfs, neugegründete Einrichtungen sind neben dieser Beratung vor allem auf organisatorische Hilfestellungen und Hinweise für Fördermöglichkeiten angewiesen. Das Pädagogische Landesinstitut Brandenburg (PLIB), die Landesagentur für Struktur und Arbeit (LASA) sowie die Landesorganisationen und Verbände sehen in der Bereitstellung dieser Supportstruktur eine ihrer vordringlichsten Aufgaben.

Mit der Verabschiedung des Weiterbildungsgesetzes sind Grundlagen für die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geschaffen worden. Die gesetzlichen Strukturen mit Leben zu füllen und eine innovative Weiterbildungslandschaft aufzubauen erfordert nicht nur von den Institutionen der Landesregierung „Neues Denken“, sondern auch von den Trägern und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vor Ort. Kooperation und Vernetzung über das bisher bekannte Maß hinaus sind notwendig.

## **Literatur**

- Ackermann, E., u.a.: Umbrüche ländlicher Arbeitsmärkte, dargestellt an Problemregionen Mecklenburg-Vorpommerns und Brandenburgs. In: Boje, J., u.a.: Zur Entwicklung ländlicher Räum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iträge z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175. Nürnberg 1993
-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Du und dein Bundesland. Bürgerhandbuch. Potsdam 1992
- Faulstich, P.: Weiterbildung in den „fünf neuen Ländern“ und Berlin. Kassel 1993
-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 Hauptvorstand (Hrsg.): Weiterbildung als Bestandteil aktiver Sozial-, Kultur- und Beschäftigungspolitik in der Region. Fachtagung zur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Frankfurt/M. 1993
-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Hrsg.): Arbeitsmarktbericht für das Land Brandenburg 1992. Potsdam 1993
-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Hrsg.): Weiterbildung im ländlichen Raum – Konzepte ländlicher Erwachsenenbildung. Tagung im Pädagogischen Landesinstitut Brandenburg im November 1993 (März/April 1994)
- Pädagogisches Landesinstitut Brandenburg (Hrsg.): Info-Dienst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Heft 1–4/1993. Ludwigsfelde

## **Weiterbildung in Mecklenburg-Vorpommern Eine Brücke in die Zukunft**

In Mecklenburg-Vorpommern steht die Weiterbildung im Schnittpunkt von Arbeitsmarkt-, Wirtschaftsstruktur- und Bildungspolitik.

Für die Arbeitsmarktpolitik bedeutete der Zusammenbruch einer gesamten Gesellschaftsordnung eine beispiellose Herausforderung, traten doch die möglichen Ursachen von Arbeitslosigkeit kumuliert und miteinander verwoben gleichzeitig auf.

Ein wesentlicher Ansatzpunkt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von Bund und Land war und ist die Weiterbildung der vom Strukturumbuch betroffenen Menschen. Sie wird auf absehbare Zeit für viele Bürger in Mecklenburg-Vorpommern eine zentrale Rolle bei der Bewältigung des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politischen Systemwandels spielen, der tiefe Spuren im Leben der Menschen hinterlassen hat.

Ziel des Landes ist es, den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Umstrukturierungsprozeß zu begleiten und soweit wie möglich abzufedern. Zugleich sollen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Wiederherstellung eines hohen Beschäftigungsniveaus erhalten und die Schaffung von wettbewerbsfähigen Arbeitsplätzen unterstützt werden, um kontinuierlich Verbesserungen der Beschäftigungssituation zu verwirklichen. Daher stand im Mittelpunkt der Weiterbildungspolitik von Bund und Land von Anfang an die berufliche Qualifizierung, da im Rahmen der Umstrukturierung und Neuorientierung des Berufs- und Beschäftigungssystems die berufliche Qualifizierung eine notwendige Bedingung für die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und -strukturen darstellte. Allgemeine und politische Weiterbildung durften gleichwohl nicht vernachlässigt werden. Allerdings ist die Frage nach Art, Umfang und Dauer der Qualifizierung heute differenzierter zu beantworten, als es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Vereinigung zuweilen geschehen ist. Zwar wurde häufig auf das hohe Berufsbildungs- und Weiterbildungsniveau der Bevölkerung in der ehemaligen DDR hingewiesen und die richtige Schlußfolgerung gezogen, daß der vorhandene „Qualifikationspool“ durch Weiterbildung zu erhalten, zu ergänzen und hinsichtlich der neuen Anforderungen anzupassen sei. Die Realisierung dieser plausiblen Forderung stößt jedoch in der Praxis auf vielfältige Schwierigkeiten. Die Qualifizierungsbedarfe sind global kaum mit hinreichender Zuverlässigkeit zu ermitteln, weil diese durch ein Faktorenbündel bestimmt werden, das von Region zu Region, von Branche zu Branche eine unterschiedliche Gewichtung erfahren hat. Dies gilt sowohl für die betrieblich-berufliche Weiterbildung als auch für die Vielzahl von beruflichen Qualifizierungen, die außerhalb der Betriebe durchgeführt wurden. Die Entwicklung von die Vorqualifikationen angemessen berücksichtigenden Weiterbildungsmodulen, die den Teilnehmer dort abholen, wo er sich im Hinblick auf seine Motivation, seinen Kenntnis- und Erfahrungsstand befindet, und gezielt bestehende Qualifikationen auffrischen, ergänzen und erweitern, ist nach wie vor ebenso wichtig wie eine stärkere Orientierung der Qualifizierung auf die tatsächlichen Erfordernisse der betrieblichen Praxis in modernen Unternehmen.

Weiterbildung ist daher nicht nur ein Instrument ein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sondern Teil einer in die Zukunft weisenden Strukturpolitik. Das Potential qualifizierter Arbeitskräfte ist ein wichtiger Standortfaktor, insbesondere für die Entwicklung einer vo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geprägten, leistungsfähigen Wirtschaftsstruktur. Das Ziel aller Qualifizierungsstrategien muß – ökonomisch gesprochen – die Sicherung und der Ausbau dieses „Humankapitals“ sein.

Weiterbildung darf aber nicht auf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reduziert werden. Ebenso wichtig ist es, die kommunikativen, kreativen, sozialen und politischen Kompetenzen zu erweitern. Die allgemeine Weiterbildung, die ihren Aufgabenschwerpunkt darin hat, das Verhältnis der Menschen zu Kultur, Gesellschaft und Umwelt zu gestalten, kann wesentliche Anregungen zur Lebensführung geben und dazu dienen, Grundrechte, insbesondere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zu verwirklichen.

Politische Weiterbildung kann das Verständnis für demokratische Willensbildungsprozesse fördern und zur aktiven Teilhabe an ihnen befähigen. Dabei kommt es darauf an, in der konkreten Ausgestaltung von Veranstaltungen zur politischen Bildung den besonderen Bedingungen in den neuen Ländern Rechnung zu tragen. Die politische Bildung hat es vor dem Hintergrund ihrer Instrumentalisierung in 40 Jahren DDR heute besonders schwer. Das bloße Übertragen von Mustern aus den alten Ländern führt deshalb in eine Sackgasse. Neue Ansätze einer politischen Bild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gilt es zu entwickeln und zu erproben.

So förderte der Sozialminister, der in Mecklenburg-Vorpommern die Weiterbildung außerhalb des öffentlichen Dienstes koordiniert, mit seinem Landesprogramm „Arbeit für Mecklenburg-Vorpommern“ zusätzlich zu den Leistung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mit Investitionshilfen für ehemalige Bildungseinrichtungen der DDR, wie zum Beispiel Volkshochschulen, Betriebsakademien, betriebliche Ausbildungsstätten und Kreislandwirtschaftsschulen, deren Um- und Neuprofilierung und trug so zum Aufbau einer neuen Trägerlandschaft in der Weiterbildung bei.

Der Sozialminister hat in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en Aufbau eines Weiterbildungsinformations- und -beratungssystems unterstützt, mit dessen Hilfe Weiterbildungsinteressenten in kommunalen und gemeinnützigen Beratungsstellen, aber auch durch einen mobilen Beratungsdienst unabhängig, trägerübergreifend und kostenlos über die vorhandenen Weiterbildungsangebote informiert und individuell beraten werden. Auf diese Weise wird versucht, das im Flächenland Mecklenburg-Vorpommern stark ausgeprägte Stadt-Land-Gefälle bei der Information über vorhandene Weiterbildungsangebote sowie emotionale Barrieren, die den Zugang zur Weiterbildung erschweren, zu überwinden.

Darüber hinaus fördert der Sozialminister berufliche Weiterbildung von besonderen Zielgruppen, aber auch, ausgehend von einem integrativen Weiterbildungsbegriff, Bildungsmaßnahmen der allgemeinen und politischen Weiterbildung, soweit diese darauf zielen, übergreifende „Schlüsselqualifikationen“ zu vermitteln. Außerdem wird durch die Förderung von Modellversuchen bewirkt, innovative Weiterbildungskonzepte zu entwickeln und zu erproben. Hinzu kommen die Haushaltsmittel der

Kultusministerin für die Förderung von Veranstaltungen der allgemeinen Weiterbildung sowie die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on April 1991 bis Dezember 1993 sind aus Landesmitteln ca. 18 Mio. DM für die allgemeine, politische und berufliche Weiterbildung aufgewendet worden, davon allein 15 Mio. DM im Rahmen des Programms „Arbeit für Mecklenburg-Vorpommern“. Die beachtlichen Anstrengungen von Bund, Land und Kommunen haben dazu beigetragen, daß sich in Mecklenburg-Vorpommern eine vielfältige Trägerlandschaft herausbilden konnte.

Allerdings hat das Geschehen auf dem Weiterbildungsmarkt gezeigt, daß es auch im Bereich der Weiterbildung eines ordnenden und Rahmenbedingungen setzenden Staates bedarf. Um die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n Mecklenburg-Vorpommern zu konsolidieren, wurde unter Federführung des Sozialministers von der Landesregierung der Entwurf für ein Weiterbildungsgesetz erarbeitet und am 25. August 1993 in den Landtag eingebracht, der das Gesetz nach Abschluß der Ausschußberatungen am 20. April 1994 verabschiedete.

Als Ordnungs-, Orientierungs- und Entwicklungsgesetz soll das Weiterbildungsgesetz den Rahmen für die Tätigkeit von Trägern und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abstecken und zur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 beitragen. Weiterbildung kann nur dann zur viel beschworenen „vierten Säule“ des Bildungswesens werden, wenn der Staat seine Verantwortung ernstnimmt. Deshalb enthält das Gesetz folgende Grundsätze:

1. Durch ein staatliches Anerkennungsverfahren, mit dem qualitative Mindestanforderungen vorgegeben werden, soll die Qualität der Weiterbildung gesichert und der Schutz der Teilnehmer a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erhöht werden.
2. Durch die durch das Gesetz den Landkreisen und kreisfreien Städten zugewiesene Aufgabe, im eigenen Wirkungskreis eine Einrichtung der Weiterbildung, in der Regel eine Volkshochschule, zu errichten und zu unterhalten, soll eine flächendeckende Grundversorgung der Bevölkerung Mecklenburg-Vorpommerns mit Angeboten der allgemeinen, politischen und beruflichen Weiterbildung erreicht werden. Bei der Sicherstellung der Grundversorgung sollen Angebote anderer Träger und Einrichtungen gleichberechtigt berücksichtigt werden.
3. Darüber hinaus eröffnet das Gesetz auch die Möglichkeit eine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von anerkannten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in freier Trägerschaft und trägt damit zu einer pluralen und dezentralen Weiterbildungsstruktur bei. Insbesondere Einrichtungen, die vorrangig allgemeine und politische Weiterbildung anbieten, und Einrichtungen mit Beherbergungsbetrieb, wie zum Beispiel Heimvolkshochschulen und Akademien, werden auf der Grundlage dieses Gesetzes Entwicklungsperspektiven gegeben. Nicht weniger bedeutsam ist es, auch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r Wirtschaft weiterhin eine gezielte Förderung zu ermöglichen.

In den Stellungnahmen der Verbände zum Gesetzentwurf wurden grundsätzlich die aufgezeigten Fördermöglichkeiten begrüßt, es wurde jedoch beklagt, daß alle Leistungen unter einen doppelten Vorbehalt gestellt wurden: den Haushaltsvorbehalt,



d.h., alle finanzwirksamen Leistungen nach dem vorliegenden Gesetzentwurf werden „nach Maßgabe des Haushalts“ gewährt – es handelt sich somit nicht um ein Leistungsgesetz –, und den „Verordnungsvorbehalt“, d.h., es wurde im Gesetzentwurf darauf verzichtet, eine Mindestförderung zu garantieren oder konkrete Fördersätze festzuschreiben. Die konkrete Ausgestaltung bleibt Rechtsverordnungen vorbehalten. Damit trägt das Land einerseits der angespannten Finanzsituation der öffentlichen Haushalte Rechnung, andererseits gibt es der Weiterbildung eine solide Grundlage, auf der sie sich zu einer wirklichen Brücke in die Zukunft für die Menschen in Mecklenburg-Vorpommern entwickeln kann. Für ein armes, strukturschwaches Land gibt es keine Entwicklungsperspektive, wenn es nicht „Weiterbildungsland“ wird.

## **Weiterbildungspolitik in Mecklenburg-Vorpommern Praktische Erfahrungen und erwachsenenpädagogische Entwürfe**

### **1. Schwierigkeiten im Gegenstand der Weiterbildungspolitik**

Die erste Erfahrung der Erwachsenenbildner mit der Weiterbildungspolitik war das (politisch gewollte?) Wegbrechen der aus der DDR stammenden Weiterbildung. In Mecklenburg-Vorpommern (M-V) – wie in den anderen neuen Bundesländern – haben hiesige Erwachsenenbildner und Bildungsträger erst allmählich neue Erfahrungen mit der Weiterbildungspolitik machen können. Einige von ihnen haben immer noch Schwierigkeiten, die sich seit drei Jahren entwickelnde Weiterbildungspolitik zu verstehen, mit ihr umzugehen und sie mit zu gestalten. Es fällt schwer, die verschiedenen Förderungsmöglichkeiten zu nutzen und sich allmählich unabhängig von dieser Förderung zu machen. Enttäuschung und Resignation breiten sich aus, wenn die Fördermöglichkeiten eingeschränkt werden oder wenn die Ergebnisse der Weiterbildung nicht immer den Absichten und Zielen entsprechen. Die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kommenden Bildungsträger haben solche Schwierigkeiten natürlich nicht, was ihnen wenigstens anfangs Vorteile einbrachte.

Weiterbildungspolitik will (soll) Weiterbildung als wichtigen Bereich des Bildungswesens im Land (Kreis, Kommune) gewährleisten. Das bedeutet Einflußnahme durch Förderung von Maßnahmen und Institutionen sowie durch Anerkennung von Zertifikaten und Prüfungen auf eine flächendeckende Versorgung und ein bedarfsgerechtes Angebot, auf Qualität und Teilnehmerschutz, auf die Auswahl von Teilnehmern und Trägern usw.

Weiterbildungspolitik als Teil der Bildungspolitik wird von den jeweils regierenden politischen Kräften geprägt. In M-V ist das eine Koalition von CDU und FDP, deren Bildungspolitik aus pädagogischer Sicht mit einiger Skepsis zu beurteilen ist, wie die Einführung der Hauptschule in M-V zeigt. Ähnliche pädagogisch nicht vertretbare Entscheidungen sind aus der Weiterbildungspolitik nicht bekannt. Das mag seine Ursache darin haben, daß das Ressort Weiterbildung im Sozialministerium vom Koalitionspartner der CDU verwaltet wird – beim Kultusministerium war dagegen eine eher zögerliche Haltung gegenüber der Weiterbildung festzustellen.

Schwierigkeiten werden jeder Weiterbildungspolitik von ihrem Gegenstand, der Weiterbildung, bereitet. Das liegt erstens an der hohen Komplexität der Weiterbildung, denn in ihr wirken sehr viel mehr Faktoren zusammen als etwa im Bereich der Schulbildung. Zweitens ist Weiterbildung auf komplizierte Weise vernetzt, z.B. mit dem Arbeitsmarkt, der Wirtschaft, der Technologie, der Ökologie, der Sozialarbeit, der Kultur usw. In M-V ist die Weiterbildung beispielsweise konfrontiert mit der besonderen Lage der mecklenburgischen Landwirtschaft, der Werftindustrie und des Tourismus. Drittens liegt die größte Schwierigkeit der Weiterbildung in der Dynamik

der Bereiche, mit denen sie vernetzt ist, so daß viele Analysen und Modellprojekte der Wirklichkeit ständig hinterherlaufen.

Die Treffsicherheit weiterbildungspolitischer Maßnahmen ist deshalb – unabhängig von der parteipolitischen Linie – nicht so hoch, wie Bildungsträger und Teilnehmer es wünschen.

## **2. Finanzierung der Weiterbildung**

Die Weiterbildung wurde in M-V vorwiegend aus Mittel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finanziert. Die Ausgaben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stiegen von über 600 Mio. DM 1991 auf 1,5 Mrd. DM 1993 – allerdings wurden 2/3 davon für Unterhaltsgeld aufgebracht. Im Jahresdurchschnitt 1993 konnten daran über 54.000 Teilnehmer partizipieren. Der von Arbeitslosigkeit am meisten betroffene Arbeitsamtsbezirk Neubrandenburg steht dabei mit 15.700 Teilnehmern an der Spitze.

Die AFG-Novelle hat erhebliche Kürzungen gebracht. Das äußert sich einerseits im Rückgang der „Eintritte in Maßnahmen der Fortbildung und Umschulung (FuU)“ (wie es in der Statistik heißt) von 119.000 im Jahre 1992 auf nur 51.000 in 1993 und andererseits im Rückgang des „Bestands an Teilnehmern in beruflichen Weiterbildungsmaßnahmen“ von ca. 50.000 im August 1993 auf ca. 45.000 im Januar 1994.

Di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durch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BA) führt auch zu Problemen. So mußten Erwartungen, daß ein vollständiger und problemloser Übertritt in normale Erwerbstätigkeit ohne „Suchzeiten“ zwischen Abschluß der Maßnahme und beruflicher Wiedereingliederung erfolgen könnte, relativiert werden. Aus den 1992 abgeschlossenen Maßnahmen waren sechs bis neun Monate später 34 % der Teilnehmer noch Leistungsempfänger. Die geförderte Weiterbildung hat also nur zu 2/3 den gewünschten Erfolg gebracht.

Kritiker der Förderung durch die Bundesanstalt bemängeln, daß große Summen für die Weiterbildung Arbeitsloser ausgegeben werden, während die Weiterbildung Beschäftigter nur mit vergleichsweise geringen Mitteln gefördert wird. Das trifft in M-V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deren Wettbewerbsfähigkeit zwar von der Qualifikation ihrer Mitarbeiter abhängt, die aber die notwendige Weiterbildung nicht immer bezahlen können.

An der Finanzierung der VHS in M-V waren 1992 die Kommunen und Kreise mit 38,6 % (5,5 Mio. DM) beteiligt. Von Land, Bund und Europäischer Union wurden 20,8 % getragen, während die Eigenfinanzierung 40,6 % der Gesamtkosten erbrachte. Für 1993 lagen im März 1994 noch keine statistischen Angaben vor; nach Auskunft mehrerer VHS kann gegenwärtig von einer Drittelfinanzierung aus den genannten Quellen ausgegangen werden. Einen interessanten Vergleich läßt der Haushaltsansatz 1993 zu: Während die Ansätze von Schleswig-Holstein und M-V 1991 noch annähernd gleich waren, betrug der Ansatz für M-V 1993 nur ein Drittel des Ansatzes für Schleswig-Holstein. Mit der maßnahmebezogenen Förderung wurde 1993 die

Teilnahme von rd. 15.000 Personen (davon 685 Schulabschlüsse) an 1.199 Kursen ermöglicht.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Beschäftigter, die Anpassungs- und Aufstiegsfortbildung, wird zum größten Teil von den Teilnehmern bezahlt. Das gilt vor allem für Maßnahmen, die mit Prüfungen und/oder einer staatlichen Anerkennung abschließen. Finanzkräftigere Unternehmen beteiligen sich in der Regel an den Kosten. Weiterbildungspolitisch wirksam werden Bundes- und Landesministerien durch die Bezuschussung bestimmter Maßnahmen, die auch durch europäische Fonds gefördert werden.

Über die Zahl der Teilnehmer lassen sich keine genauen Angaben machen, da hier im zunehmenden Umfang auch freie Träger beteiligt sind. Aus den Angaben der Kammern läßt sich vermuten, daß gegenwärtig in M-V wenig mehr als 10.000 Teilnehmer partizipieren.

Ein geringerer Teil weiterbildungspolitischer Maßnahmen besteht in der Förderung der Weiterbildungsberatung durch Bund, Land und Kommunen – z.T. durch Nutzung der Möglichkeiten des zweiten Arbeitsmarktes.

Schließlich muß auch die Förderung von Analyse-, Modell- und Entwicklungsprojekten zu den in M-V zur Wirkung gelangenden weiterbildungspolitischen Maßnahmen gerechnet werden. Durch Analyseprojekte wird die Weiterbildungspolitik mit den für ihre Entscheidungsfindung benötigten Daten versorgt; durch die Modell- und Entwicklungsprojekte werden neue Möglichkeiten für die Weiterbildungspraxis erschlossen. Die Förderung erfolgt hier durch Bundes- und Landesministerien, durch Kreise und Kommunen unter Einbeziehung europäischer Fonds.

Die verschiedenartige Förderung ist vielfach nicht abgestimmt, die Mittel gelangen nicht konzentriert zum Einsatz, so daß Effizienzverluste unvermeidlich sind.

### **3. Die Gesetzeslage**

Das Weiterbildungsgesetz konnte Ende Februar 1994 wegen geschäftsordnungsrechtlicher Probleme nicht verabschiedet werden.

Der vorliegende Entwurf wird von den Kammern und einigen freien Bildungsträgern wegen der Zuordn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zur Volkshochschule kritisiert. Die Landesvertretungen der Bildungsträger und andere Bildungsträger erwarten, daß nachfolgende Rechtsverordnungen dieses Problem klären werden.

Aus erwachsenenpädagogischer Sicht ist anzumerken, daß sich der Gesetzentwurf nicht auf die betriebliche Weiterbildung bezieht. Eine Förderung wird sich hier wohl auf andere ggf. noch zu schaffende Rechtsvorschriften stützen müssen. Schwierigkeiten entstehen auch durch die Bestimmung der Weiterbildung als „organisiertes Lernen“. Betriebliche Weiterbildung wird zunehmend das Lernen in der Arbeit anregen und beraten müssen – das ist aber etwas anderes als organisiertes Lernen. Auch der Potentialerhalt bei Langzeitarbeitslosen wird allein durch organisiertes Lernen nicht möglich sein.

#### 4. Die Situation der Träger bzw. Einrichtungen

Nachdem 1990 in den ehemaligen DDR-Bezirken Neubrandenburg, Rostock und Schwerin (dem heutigen Mecklenburg-Vorpommern) die Weiterbildung stark eingeschränkt und in einigen Regionen auch zum Erliegen gekommen war, setzte ab Herbst 1990 eine neue Entwicklung ein. Die Fördermöglichkeiten des Arbeitsamtes nach AFG wurden vor allem von Bildungsträgern aus Westdeutschland und einigen wenigen neugegründeten ostdeutschen Bildungsträgern genutzt. Ab Ende 1990 gab es in der Entwicklung der Bildungsträger einen regelrechten Boom, hauptsächlich über die Lehrgänge nach AFG § 41a. Nicht alle Anbieter waren seriös, aber die einsetzenden Qualitätsansprüche und ihre zunehmende Kontrolle haben bald dazu geführt, die Spreu vom Weizen zu scheiden.

1992 gab es eine (zu) große Zahl von Weiterbildungsträgern, die alle von den Fördermitteln des Arbeitsamtes existierten. Die Einschränkung der Förderungen nach der AFG-Novelle führte ab Herbst 1993 zu einer Reduzierung auf etwa 120 freie Träger im Land. Man rechnet damit, daß Ende 1994 die Zahl der Anbieter auf 60 abgesunken sein könnte. Die Mehrzahl der freien Träger existierte auch im Frühjahr 1994 zu 80 bis 90 % aus Mitteln des Arbeitsamtes, nur wenige erreichten eine Finanzierung durch Unternehmen und/oder Teilnehmer zu etwa 40 %, so daß für viele 1994 ein Jahr des Überlebenskampfes sein wird. Für die Weiterbildungspolitik ist das wichtig, weil darunter auch Bildungsträger mit speziellen Angeboten sind, für die eigentlich kein Ersatz bereitsteht.

Außerdem ist bedenklich, daß durch diese existentielle Bindung der freien Träger an die Anforderungskataloge der Arbeitsämter und der Kammern keine anderen ergänzenden Angebote auf den Weiterbildungsmarkt kommen. Mitunter werden Elemente der allgemeinen oder politischen Erwachsenenbildung aus den beantragten Maßnahmen herausgekürzt, so daß solchermaßen korrigierte Bildungsträger von ähnlichen Angeboten in Zukunft absehen.

Diese Prägung der Bildungsträger durch Förderung hat auch dazu geführt, daß die meisten Träger auf das Lehrgangsprinzip fixiert sind. Nur wenige sind in der Lage, dem Bedarf von kleinen oder mittleren Unternehmen (die Großen helfen sich selbst!) an Weiterbildung als Lernen in der Arbeit, verbunden mit Personal- und Organisationsentwicklung – noch dazu bei gruppenorientiertem Produktionskonzept – zu entsprechen. In vielen Fördermitteln sind nur wenig, oft gar keine Sachkosten enthalten. Das führt bei nicht wenigen Bildungsträgern zu ausgesprochener Kargheit in der Unterrichtstechnologie. In ländlichen Regionen kommt es durchaus vor, daß der Honorar Dozent (Ost) seinen eigenen Overhead-Projektor mit Projektionsfläche mitbringen muß. Vor Ort – und vom Bildungsträger gestellt – findet er nur einen alten Polylux und als Projektionsfläche die gemusterte Tapete im Vereinszimmer des Gasthofes ...

Die Volkshochschulen haben eine langsamere Entwicklung genommen; einen Boom wie bei den freien Trägern hat es hier nicht gegeben.

Gegenwärtig existieren die meisten VHS durch die beim Kultus- oder Sozialministerium mögliche maßnahmebezogene Förderung mit langen und komplizierten Antragswegen. Ansonsten sind sie auf die Haushaltsansätze der Kommunen oder Kreise angewiesen – mitunter geht davon die Miete für kommunale Räume gleich wieder ab. Die im Weiterbildungsgesetzentwurf vorgesehene institutionsbezogene Förderung (anscheinend gibt es diese nur für einige Heimvolkshochschulen und Akademien) wird deshalb von vielen VHS sehnlich erwartet, weil sie darin eine arbeitsleichternde und effektsteigernde Ergänzung zur weiterhin notwendigen maßnahmebezogenen Förderung sehen.

Die von den Volkshochschulen angebotene berufsorientierte Weiterbildung wird von freien Trägern als eine wettbewerbsverzerrende Konkurrenz empfunden.

Wegen der bevorstehenden Kreisgebietsreform in M-V gibt es Unsicherheiten, da sich die Zahl der Kreisvolkshochschulen verringern wird. Es wird angestrebt, die bisherigen VHS als Arbeitsstellen ohne Personalabbau zu erhalten, um die flächendeckende Grundversorgung zu gewährleisten.

Andere kommunal geförderte Träger sowie die Bildungszentren der Kammern haben ebenfalls eine langsamere Entwicklung genommen.

Für die bisher vorwiegend über den zweiten Arbeitsmarkt geförderten Träger besteht mit der künftigen Möglichkeit einer institutionsbezogenen Förderung die Chance der Stabilisierung. Wegen der Prüfungshoheit der Kammern haben deren im Aufbau befindliche Bildungszentren keine Existenzprobleme – das gilt auch für die mit ihnen durch Kooperation fest verbundenen Bildungsträger. Hier gibt es vor allem im gewerblich-technischen Bereich eher Probleme der Kosten, da die zur Aus- und Weiterbildung benötigten technischen Anlagen nach drei bis fünf Jahren veralten und durch neue ersetzt werden müssen. Die Kosten dafür schlagen dann auf die Unternehmen und die Teilnehmer durch, die das in vielen Fällen gegenwärtig nicht bezahlen können.

##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m Freistaat Sachsen**

Wie in allen neuen Bundesländern lagen die Schwerpunkte in Angebot und Nachfrage auf dem Gebiet der Weiterbildung seit 1990 im Bereich beruflicher Weiterbildung und Umschulung.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der Europäische Sozialfonds sowie da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Arbeit stellten dafür beträchtliche Mittel zur Verfügung.

Das Sächsische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verfolgte bei der Förderung der allgemeinen, politischen, kulturellen und sozialen Weiterbildung zunächst zwei Ziele:

1. den Erhalt und den Ausbau eines stabilen Angebotsnetzes bei Maßnahmen dieses Bereiches,
2. die Entwicklung einer sowohl in Hinsicht auf die Trägerschaft als auch auf die Inhalte pluralistisch entfalteten „Weiterbildungslandschaft“.

Der erste Punkt wurde vor allem mit Hilfe der 48 sächsischen Volkshochschulen und ihres Verbandes erreicht. Hier galt es, kommunale Weiterbildungszentren zu übernehmen. Diese Entwicklung fand vorerst ihren Abschluß mit der Übernahme des pädagogischen Personals der Volkshochschulen aus dem Landesdienst in den Kommunaldienst bzw. im Einzelfall in Volkshochschulen in freier Trägerschaft.

Der Sächsische Volkshochschulverband e.V. wird als Partner des Sächsischen Kultusministeriums bei der Durchsetzung weiterbildungspolitischer Vorhaben institutionell gefördert.

Zum zweiten setzte 1991 die Förderung von Landesorganisationen und Einzel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ein. Diese erstreckte sich sowohl auf kirchliche und gewerkschaftliche wie auch auf neugegründete freie Bildungswerke. Dabei wird eine Strategie verfolgt, die auch kleineren Einrichtungen mit eigener regionaler oder besonderer inhaltlicher Prägung eine Entwicklungschance einräumt. Die Festlegung einer Mindeststundenzahl von 600 pro Jahr als untere Grenze für eine Förderung ist das dazu geeignete Instrument.

In der Verfassung des Freistaates Sachsen ist in Artikel 108 folgendes bestimmt:

- „ (1) Die Erwachsenenbildung ist zu fördern.  
(2)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können außer durch den Freistaat und die Träger der Selbstverwaltung durch freie Träger unterhalten werden.“

Den rechtlichen Rahmen für di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stellen seit 1992 Förderrichtlinien dar, nach denen Verbände und Landes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Zuschüsse zu den Personalkosten, den Sachkosten und zu besonderen Projekten im Rahmen verfügbarer Haushaltsmittel gewährt werden. Bei der Förderung gilt Projekten, die sich der politischen Bildung, der Gewaltprävention und der Aufarbeitung der Geschichte sowie dem Zugang zu fremden Völkern und Kulturen widmen, besondere Aufmerksamkeit.

Die Verabschiedung eines Weiterbildungsgesetzes wird von der Staatsregierung als mittelfristige Aufgabe angesehen.

Steigende Stunden- und Teilnehmerzahlen sowie sich festigende Strukturen kennzeichnen die Bilanz des Jahres 1993 bei den 48 Volkshochschulen und den ca. 30 geförderten 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Insgesamt wurden 350.000 Stunden und 21.000 Teilnehmertage abgerechnet. Ein Landesausschuß für Weiterbildung wird sich aufgrund einer Trägerinitiative als Partner des Kultusministeriums in diesem Jahr konstituieren. Weiterhin ist eine Arbeitsgemeinschaft von kommunal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gebildet worden, die im ständigen Kontakt mit dem zuständigen Referat „Erwachsenenbildung und Volkshochschulen“ des Staatsministeriums für Kultus steht.

In Zusammenarbeit mit den Lehrstühlen für Erwachsenenbildung der Universität Leipzig und der Technischen Hochschule Chemnitz werden Weiterbildungsangebote für Erwachsenenbildner vorbereitet.

Das Nachholen von Bildungsabschlüssen im allgemeinbildenden Bereich ist durch das Sächsische Schulgesetz staatlichen Abendmittelschulen, Abendgymnasien und Kollegs vorbehalten. Es wurden 1992 8 Schulen des Zweiten Bildungsweges eingerichtet, an denen zur Zeit 2.000 Teilnehmer Lehrgänge zum Erwerb des Haupt- oder Realschulabschlusses bzw. des Abiturs absolvieren. Für die Kurse ist im Freistaat Sachsen die Lehr- und Lernmittelfreiheit garantiert.

Resümierend kann gesagt werden, daß auf dem immer noch starken Veränderungen unterworfenen Weiterbildungsmarkt nach dem großen Gründer-Boom 1990/91 sich nach und nach Qualität und Seriosität von Anbietern durchzusetzen beginnen.

Das Sächsische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bemüht sich in diesem Prozeß um eine Evaluierung durch Anerkennungskriterien für die Förderung sowie um Unterstützung vor allem der Bereiche der allgemeinen und politischen Bildung, die im freien Spiel des Marktes auf der Strecke zu bleiben drohen.



## **Sächsisches Weiterbildungsgesetz in weiter Ferne? Zur weiterbildungspolitischen Situation im Freistaat Sachsen**

1.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Entwicklung der ostdeutschen Bundesländer nach der Wiedervereinigung läßt den Schluß auf eine Vorreiterrolle des Freistaates Sachsen zu. Die erstaunliche Geschwindigkeit der Umstrukturierung der Wirtschaft und die damit einhergehenden Veränderungen im Sozialverhalten der Menschen, aber auch die Notwendigkeit der Anpassung an völlig neue Lebenssituationen erfordern zwangsläufig eine diesen Bedingungen angepaßte Weiterbildungsvielfalt. Wenn auch nicht in allen Auswirkungen erkennbar, so war diese Entwicklung – wie auch von der Politik immer wieder vorhergesagt – absehbar. Was also hätte näher gelegen, als den zu erwartenden Bildungsbedarf und das Wirken der Weiterbildungseinrichtungen in Sachsen durch entsprechende gesetzliche Regelungen zu begleiten. Am Ende der ersten Legislaturperiode des sächsischen Landtages muß das Fehlen eines Weiterbildungsgesetzes und damit ein Abstimmungsdefizit zwischen Wirtschaftsentwicklung und Bildung konstatiert werden. Dies ist insbesondere deshalb bedauerlich und auch aus wirtschaftlicher Sicht kaum zu verantworten, weil sich in kürzester Zeit nach der Wende der Weiterbildungsbereich zum boomenden Wirtschaftszweig entwickelte. Wenngleich es verschiedene Bemühungen um gesetzliche Regelungen gab, muß doch ihre Ernsthaftigkeit in Frage gestellt werden. Insbesondere die Gesetzesinitiative der Staatsregierung kann kaum den Eindruck erwecken, daß man in Dresden die Bedeutung der Weiterbildung für die Entwicklung des Freistaates erkannt hat.

Der erste Entwurf eines sächs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stammte aus der Feder einer Arbeitsgruppe des Sächsi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e.V. Schon im Frühjahr 1991 wurde dieser dem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im folgenden SMK) zur Beratung vorgelegt. Es erfolgte keine Reaktion. Der im Juni 1992 zur Diskussion gestellte Referentenentwurf des SMK enthielt zwar wesentliche Aussagen zur Weiterbildungsvielfalt, sicherte aber den Weiterbildunglern in der vorliegenden Fassung in keiner Weise notwendige langfristige Finanzierungsgrundlagen zu. Die von freien Trägern, dem Volkshochschulverband und den kommunalen Spitzenverbänden diesbezüglich formulierten Stellungnahmen führten zu einem Zurückziehen des Entwurfs und verhinderten schon die erste Lesung im Landtag. Ein von der SPD-Landtagsfraktion erarbeiteter Entwurf eines Weiterbildungsgesetzes fand aufgrund der politischen Mehrheitsverhältnisse ebenfalls nicht den Weg in den Landtag.

Im Jahr 1993 verstummte schließlich die Diskussion um ein Weiterbildungsgesetz völlig. In einem Schreiben des Ministerpräsidenten Prof. Kurt Biedenkopf an den Vorsitzenden des Sächsi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im folgenden SVV) spiegelt sich die Position der jetzigen Staatsregierung wider:

„... An dem von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im Juni 1992 zur Anhörung freigegebenen Entwurf wurde von den Betroffenen, so auch von Ihrem Verband, im wesentlichen kritisiert, daß die große Anzahl an Kann-Bestimmungen im Gesetz keine ausreichende Finanzierungssicherheit schaffen würde. Gleichwohl konnte auf der Grundlage der jährlich fortgeschriebenen Richtlinien des Staatsministeriums für Kultus und dank der engagierten Arbeit der Volkshochschulmitarbeiter eine vernünftige Volkshochschularbeit geleistet werden ... Wegen der nach wie vor schwierigen finanziellen Situation des Freistaates Sachsen werden auch künftig die jetzt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 für die Weiterbildung nicht gesetzlich garantiert werden können“ (Kurt Biedenkopf : Brief, 02.12.1993).

Eine Prognose für das Inkrafttreten eines sächs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ist schwierig. Für den Fall einer Regierungsbeteiligung der SPD ist von dieser in der neuen Legislaturperiode nach Aussage des Fraktionsvorsitzenden Kunkel eine entsprechende Initiative zu erwarten. DGB, kommunale Spitzenverbände und der SVV halten ein Weiterbildungsgesetz im Freistaat Sachsen für unverzichtbar. Darüber hinaus fordert der DGB parallel zu diesem die Verabschiedung eines Bildungsurlaubsgesetzes.

2.

Trotz Kritik an der weiterbildungspolitischen Passivität der Staatsregierung im Gesetzgebungsverfahren wurden durch die Richtlinien zur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Freistaat Sachsen, erlassen vom Kultusministerium, eine ausreichende jährliche Finanzierungssicherheit und eine angemessene staatlich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erreicht. Freie Träger und Volkshochschulen erfahren unter der Voraussetzung der anerkannten Förderwürdigkeit eine anteilige Bezuschussung im Personal- und Sachkostenbereich.

Volkshochschulen in kommunaler Trägerschaft gelten entsprechend den Förder Richtlinien als vom SMK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und unterliegen damit nicht der Antragspflicht zur Förderung.

Erfreulich aus der Sicht der Volkshochschulen ist das Zugrundelegen der Empfehlungen der KGSt zum Stellenschlüssel in Abhängigkeit von der Kursstundenzahl für die Personalkostenbezuschussung im Folgejahr.

Die Bewilligung eines Personalkostenzuschusses in Höhe von bis zu 50 % für HPM (für Verwaltungsangestellte 40 %) bei 600; 2000; 4000; 6000; ... geleisteten Stunden ermöglicht den Kommunen die Ausstattung ihrer Volkshochschulen mit ausreichendem und qualifiziertem Personal. Die gleiche Regelung gilt für die anerkannten freien Bildungsträger.

In Verbindung mit einer anteiligen Förderung der entstehenden Sachkosten in Höhe von bis zu 20 % wird in der Summe eine staatliche Stützung der Volkshochschulen von im Landesdurchschnitt ca 30 % erreicht.

Die Förderung der Landesverbände ist im Punkt 5 der „Richtlinie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für Kultus für di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1993“ (veröffentlicht im Amtsblatt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für Kultus, 01.02.1993, Seite 83) geregelt.

Der SVV, wie auch andere Landesverbände, kann bei Nachweis von mindestens 20.000 Unterrichtsstunden im Rahmen des Landeshaushaltes eine jährliche Bezuschussung erhalten.

Für die Haushaltsplanungen der Träger der Weiterbildungseinrichtungen erweist sich der späte Veröffentlichungstermin der jährlichen Förderrichtlinien als ungünstig. Die Haushaltsgremien sind so gezwungen, die Haushaltsansätze jeweils auf der Grundlage der schon nicht mehr geltenden Richtlinien des Vorjahres zu erstellen.

3.

Unter dem Aspekt der öffentlichen Weiterbildungspolitik betrachtet, führte insbesondere die Novellierung des AFG durch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zu einer Strategieveränderung der Weiterbildung. Noch immer gilt zwar für di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im Bereich der Umschulungen das Prinzip, sich zuerst an den Richtlinien der Förderung durch die lokalen Arbeitsämter und nicht an dem tatsächlichen Bildungsbedarf zu orientieren, jedoch erfolgt durch die Arbeitsämter jetzt endlich eine arbeitsmarktorientiertere Vergabe von Bildungsaufträgen. Durch nicht mehr vergebene Auftrags- und deutlich verringerte freie Maßnahmen geraten zunehmend freie Bildungsträger unter wirtschaftlichen Druck. Dies führt zu einer Verschärfung der Konkurrenzsituation und zu Konkursen vo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Aufgrund der Verringerung der Anzahl der Bildungsanbieter erhöht sich zwangsläufig die Bedeutung der Volkshochschulen. Gleichzeitig ist aber zu verzeichnen, daß private Bildungsanbieter, die zu Zeiten der Bildungshochkonjunktur in Ostdeutschland ausschließlich von Umschulungsmaßnahmen lebten, aus ökonomischen Gründen gezwungen sind, immer weiter in den Bereich der allgemeinen Weiterbildung einzudringen. In gleichem Maße, wie sich für die Volkshochschulen Möglichkeiten der Erweiterung der beruflichen Bildung ergeben, müssen sie die Sicherung der Marktanteile in den für sie traditionellen Bildungsbereichen betreiben. Der so entstehende zusätzliche Konkurrenzdruck darf durchaus auch positiv betrachtet werden, zwingt er doch die Volkshochschulen (aber auch freie Bildungsträger), verstärkt der Qualitätssicherung und der Vielfalt der Bildungsangebote Bedeutung beizumessen.

Abschließend 3 Thesen zur Sicherung der Weiterbildung im Freistaat Sachsen in den nächsten Jahren:

#### *1. Thes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und inhaltliche Modernisierung des Bildungswesens bedingen sich gegenseitig und bedürfen gleicher Beachtung. Die Absicherung der Weiterbildungsgrundversorgung auf lange Sicht erfordert gesetzliche Regelungen in Form eines Weiterbildungsgesetzes.

#### *2. These*

Die sächsischen Volkshochschulen leisten sowohl für die allgemeine als auch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einen unverzichtbaren Beitrag. Sie bedürfen aufgrund der

einzigartigen Vielfältigkeit ihrer Bildungsangebote und ihres sozialen Engagements der besonderen Förderung durch den Freistaat.

### *3. These*

Die moderne Volkshochschule der Zukunft ist durch betriebswirtschaftliche Führung und qualitätssicherndes Controlling gekennzeichnet. Der Volkshochschule in kommunaler Trägerschaft kommt besondere Bedeutung zu. Ihre Einbettung in die Kommunalverwaltung muß neu organisiert werden. Vor allem zentralistische Verwaltungsstrukturen behindern ein aktives Reagieren auf Marktveränderungen im Wirkungsfeld der Volkshochschulen.

##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m Land Sachsen-Anhalt**

Die Erwachsenenbildung gehört im Land Sachsen-Anhalt zum Geschäftsbereich des Kultusministeriums. Sie ist im Gesamtkomplex der Weiterbildung ein eigenständiger, gleichberechtigter und vernetzter Bildungsbereich, der auf den in Schule, Berufsausbildung und Hochschule erworbenen Kenntnissen und Fähigkeiten sowie den gewonnenen Berufs- und Lebenserfahrungen aufbaut. Die vorrangig nicht beruflich orientierte Weiterbildung – die Erwachsenenbildung – wird inhaltlich im wesentlichen durch die Bildungsbereiche „Allgemeine Bildung“, „Kulturelle Bildung“ und „Politische Bildung“ bestimmt.

Die grundlegend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Erwachsenenbildung sind in den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zur Erwachsenenbildung fixiert worden. Am 17. September 1993 traten die vorläufig letzten Folgebestimmungen zum Gesetz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EBG) – die Richtlinien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gemäß §§ 6 und 7 EBG – in Kraft.

Der 17. September 1993 ist für die Erwachsenenbildung in Sachsen-Anhalt insofern ein markantes Datum, weil mit diesem Tage alle rechtlichen und finanziellen Rahmenbedingungen des Landes für eine solide und pluralistische Weiterentwicklung der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Rechtskraft erlangt haben. Das Land Sachsen-Anhalt war damit das erste der neuen Länder, das über ein vollständiges Regelungswerk zur Erwachsenenbildung verfügt.

Die erste einschlägige Rechtsvorschrift war der Runderlaß des damaligen Ministeriums für Schulen, Erwachsenenbildung und Kultur vom 12. August 1991 „Richtlinien zur Gewährung von Landes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iese Richtlinien sind inzwischen durch das o.g. Regelungswerk abgelöst worden.

Dieses umfaßt:

- Gesetz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vom 25. Mai 1992 (GVBl. LSA S. 379)  
mit folgender Struktur:

### *Abschnitt I*

- Allgemeine Vorschriften  
Stellung und Aufgabe der Erwachsenenbildung

### *Abschnitt II*

- Förderung
- Förderungsgrundsatz
- Form und Verfahren der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 Voraussetzungen für die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von Einrichtungen

- Grundförderung (§ 5)
-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 6)
- Zuwendungen für Investitionen, Lehrmittel und Modellvorhaben (§ 7)
- Förderung nicht anerkannter Einrichtungen (§ 8)

#### *Abschnitt III*

- Landesausschuß für Erwachsenenbildung

#### *Abschnitt IV*

- Sonstige Vorschriften, u.a. Unterrichtung des Landtages (§ 13)
-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VO-EBG) vom 26.08.1993 (GVBl. LSA S. 454) – enthält Regelungen zur Durchführung von § 5 Abs. 2 EBG – Grundförderung
- Richtlinien zu §§ 6 und 7 EBG (Runderlässe des Kultusministeriums – MK – vom 26.08.1993)
- Verwaltungsvorschrift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VV-EBG) – RdErl. des MK vom 03.09.1993.

Das EBG enthält keine Festlegungen zum Geltungszeitraum, die DVO-EBG ist befristet bis zum 31.12.1995. Die Richtlinien zu §§ 6 und 7 EBG sind an das EBG gekoppelt, die VV-EBG an die DVO-EBG.

In Vorbereitung befindet sich eine spezielle Richtlinie zur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von Heimvolkshochschulen (RL HVHS).

In der Legislaturperiode 1994 bis 1998 des Landtages ist darüber zu befinden, ob für das Regelungswerk zur Erwachsenenbildung gegebenenfalls Novellierungsbedarf besteht.

Die Förderung (Finanzierung) der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bzw. deren Träger erfolgt durch Zuschüsse bzw. Zuwendungen auf der Grundlage des EBG und der dazu ergangenen Folgebestimmungen. Voraussetzung für die Ausreichung von Fördermitteln ist grundsätzlich die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der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oder deren Träger nach den Bestimmungen des EBG. Nicht anerkannten Einrichtungen, deren Zusammenschlüssen oder Trägern *kann* das Land auf Antrag Zuwendungen für Aufgaben der Erwachsenenbildung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gewähren.

Die Zuschüsse bzw. Zuwendungen für anerkannte Einrichtungen sind wie folgt strukturiert:

- Grundförderung gem. § 5 EBG

Pflichtleistung des Landes als Personal- und Sachkostenzuschuß jährlich als Pauschale zu beantragen.

Die Höhe der Förderung richtet sich nach einem Stellen- und Sachkostenschlüssel, der nach dem erbrachten Arbeitsumfang zu bemessen ist (§§ 5 und 7 DVO-EBG).

-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gem. § 6 EBG  
Freiwillige Leistung des Landes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die jährlich zu beantragen ist.  
Zuwendungen zur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können an als förderungsfähig anerkannte Bildungseinrichtungen unabhängig von der Grundförderung ausgereicht werden für:
  1. die in eigener pädagogischer Verantwortung stattfindende Bildungsarbeit und
  2. die Fortbildung ihres Personals.
 Einzelheiten sind in der Richtlinie zu § 6 EBG geregelt.
- Zuwendungen für Investitionen, Lehrmittel und Modellvorhaben gem. § 7 EBG  
Freiwillige Leistung des Landes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An als förderungsfähig anerkannte Einrichtungen, deren Zusammenschlüsse oder deren Träger können auf Antrag Zuwendungen gewährt werden für:

1. die Errichtung, Erweiterung, Instandsetzung und Einrichtung von Bauten und Räumen,
2. die Ausstattung mit Lehr- und Arbeitsmitteln und
3. Modellvorhaben oder Innovationen auf dem Gebiet der Erwachsenenbildung.

Einzelheiten sind in der Richtlinie zu § 7 EBG geregelt.

Seit der Errichtung des Landes Sachsen-Anhalt, am 14. Oktober 1990, hat sich eine *pluralistische Landschaft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entwickelt. In ihr sind zarte junge Pflänzchen ebenso vertreten wie ausgewachsene mit sehr langer Tradition. In dieser Landschaft vollzieht sich ständig ein Evolutionsprozeß. Der Prozeß des Entstehens, der Wegfindung und des Konsolidierens der Bildungseinrichtungen ist gegenwärtig noch nicht abgeschlossen. Er wird voraussichtlich noch zwei bis drei Jahre andauern.

Nach den landesrechtlichen Bestimmungen zur Erwachsenenbildung werden di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hinsichtlich ihrer Struktur und Wirkungsfelder gegliedert in:

- a) Landesweite Zusammenschlüsse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 gegenwärtig existiert der Landesverband der Volkshochschulen Sachsen-Anhalt e.V., der gleichzeitig ein kommunaler Fachverband ist.
- b) Landesweit tätig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Verbände) – es existieren Einrichtungen in Trägerschaft der Gewerkschaften, Kirchen, Parteien, Stiftungen und Wirtschaftsverbände, aber auch solche, die keinem Träger zugeordnet sind.
- c) Regional begrenzt tätig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 vorrangig vier städtische und 37 Kreisvolkshochschulen.
- d) Heimvolkshochschulen – vier Heimvolkshochschulen, davon drei in Trägerschaft der Kirchen, sind tätig bzw. befinden sich in der Aufbauphase.

Abschnitt III (§§ 9 und 10) des EBG enthält Regelungen zum *Landesausschuß für Erwachsenenbildung (LAEB)*. Die konstituierende Sitzung des LAEB fand am 04.02.1993 statt. Seine Mitglieder und deren Stellvertreter wurden vom Kultusminister auf vier Jahre berufen. Im LAEB arbeiten Vertreter der Zusammenschlüsse und Verbände der als förderungsfähig anerkannten Einrichtungen oder deren Träger, der kommunalen Spitzenverbände und der Landesrektorenkonferenz mit. Zusätzlich ist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es Landes Sachsen-Anhalt vertreten. Der LAEB ist tätig als Beratungsgremium der Landesregierung. Seine Aufgaben sind im § 10 des EBG definiert.

Die Geschäftsordnung des LAEB wurde vom Kultusminister am 26.05.1993 genehmigt. Die Geschäftsstelle des LAEB beim Kultusministerium ist ab 01.06.1993 eingerichtet worden.

§ 13 des EBG verpflichtet die Landesregierung, jährlich, erstmals bis spätestens 01. Oktober 1993, dem Landtag schriftlich Bericht über den Vollzug des EBG zu erstatten. Unter dankenswerter Mitarbeit der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sowie der Regierungspräsidien Dessau, Halle und Magdeburg ist durch das Kultusministerium der Entwurf des *1. Erwachsenenbildungsberichtes* termingemäß erarbeitet worden. Er wurde durch das Landeskabinett bestätigt und dem Präsidenten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zugeleitet.

Der 1. Erwachsenenbildungsbericht war als Eröffnungsbilanz der Erwachsenenbildung in Sachsen-Anhalt konzipiert worden. Er ist zugleich Bestandsaufnahme und Grundlage für die weitere Entwicklung der Erwachsenenbildung.

Wir befinden uns gegenwärtig im Land Sachsen-Anhalt am Anfang der Diskussion zur Situation sowie den Zielen und Entwicklungslinien der Erwachsenenbildung. Ein erster Höhepunkt in dieser Diskussion war die *1. Fachtagung Erwachsenenbildung „Erwachsenenbildung in Sachsen-Anhalt – Ergebnisse, Aufgaben und Probleme“*, die am 08. Dezember 1993 in der Landeshauptstadt Magdeburg durchgeführt wurde. Veranstalter war das Kultusministerium in Zusammenarbeit mit dem Landesausschuß für Erwachsenenbildung.

Die Resonanz der 1. Fachtagung Erwachsenenbildung bekräftigte die Absicht des Veranstalters, aufbauend auf den Ergebnissen dieser Tagung eine Traditionslinie zu entwickeln, die „Magdeburger Tage der Erwachsenenbildung“. Sie sollen im Abstand von zwei Jahren stattfinden. Gegenstand der 1. Fachtagung war eine Vielzahl von Teilaspekten der Erwachsenenbildung. Im Jahre 1995 soll ein Schwerpunkt Gegenstand der Beratung sein. Er könnte „Qualitätssicherung in der Erwachsenenbildung“ heißen.

#### **Literatur**

Kultusministerium des Landes Sachsen-Anhalt (Hrsg.): Bericht der Landesregierung über den Vollzu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 Erwachsenenbildungsbericht. Magdeburg 1993

Kultusministerium des Landes Sachsen-Anhalt (Hrsg.): Rechtsgrundlagen des Landes Sachsen-Anhalt zur Erwachsenenbildung. Magdeburg 1993



## **Weiterbildungspolitik im Land Sachsen-Anhalt**

Die Weiterbildungspolitik im Land Sachsen-Anhalt ist durch relativ frühe Regelungen gekennzeichnet. Der erste Grobeinschnitt war der im Januar 1991, indem durch ein Fernschreiben des Kultusministers die Landkreise darauf aufmerksam gemacht wurden, daß Volkshochschulen nicht mehr zum Bereich der Bildung gehörten und in kommunale Trägerschaften zu übernehmen seien. Zu diesem Zeitpunkt hatten sich neben den Volkshochschulen in Sachsen-Anhalt bereits weiter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konstituiert und mit ihrer Arbeit begonnen. Dazu zählten vor allem die Bildungsvereinigung Arbeit und Leben des DGB, das Bildungswerk der DAG, die Ländliche Erwachsenenbildung, die Evangelische Akademie, die Evangelische Erwachsenenbildung, die Katholische Erwachsenenbildung, die URANIA und der Landesverband der Volkshochschulen. Weiter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wie das Bildungswerk Sachsen-Anhalt der Jacob-Kaiser-Stiftung e. V., das Bildungswerk der Wirtschaft Sachsen-Anhalt e. V., das Paritätische Bildungswerk mit seinem Landesverband Sachsen-Anhalt sind in diesem Kreis zu nennen. Bereits im Jahre 1991 gab es erste Versuche, Heimvolkshochschulen in Sachsen-Anhalt zu gründen. Während also im Frühjahr 1991 die Kommunen sich zu ihren Volkshochschulen bekennen mußten, gab es zu dieser Zeit noch keine Förderung des Landes Sachsen-Anhalt für die Erwachsenenbildung. Zum 1. Juli 1991 waren die im Ministerium für Schulen, Erwachsenenbildung und Kultur erarbeiteten „Richtlinien zur Gewährung von Landes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in Kraft. Ziel dieser Richtlinien war es, durch Förderung den Aufbau und den Ausbau von leistungsfähig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zu ermöglichen, die eine dauerhafte bedarfsgerechte Versorgung der Bevölkerung mit Maßnahmen der allgemeinen, kulturellen, politischen und beruflichen Bildung gewährleisten. Bemerkenswert ist, daß zu diesem Zeitpunkt die berufliche Bildung im Kontext mit der allgemeinen, kulturellen und politischen Bildung genannt wurde. Diese Richtlinie zur Gewährung von Landes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nannte als Zuwendungsempfänger Träger von Volkshochschulen, einen Landesverband der Volkshochschulen, landesweit arbeitend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die ihre Ziele und ihre Leistungsfähigkeit hinreichend glaubhaft machen. In den Zuwendungsvoraussetzungen dieser Richtlinie fanden Bestimmungen Eingang, die später im Erwachsenenbild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weitgehend übernommen worden sind. Dazu zählte, daß Einrichtungen zu fördern seien, die ausschließlich der Erwachsenenbildung dienen, entsprechend ihrer Satzung gemeinnützig sind, ihren Sitz im Land Sachsen-Anhalt haben, jeder Person offenstehen und die Teilnahme freistellen, Bildungsarbeit überwiegend in den Bereichen der allgemeinen, kulturellen und politischen Bildung betreiben, Leistungen in eigener pädagogischer Verantwortung nachweisen. Bemessungsgrundlagen für die institutionelle Förderung im Rahmen von Zuschüssen (Anteilfinanzierungen) waren festgelegt auf Personalkostenzuschüsse für hauptamt-

liche Mitarbeiter, d.h. also sowohl hauptberufliche pädagogische Mitarbeiter wie auch hauptberufliche Verwaltungskräfte, in Höhe von 70 %.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konnte das Land Zuschüsse zu den allgemeinen Kosten gewähren. Eine Zuwendung konnte gewährt werden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im laufenden Haushaltsjahr die hauptberuflichen pädagogischen Mitarbeiter mindestens 2.400 Unterrichtsstunden zu leisten hatten, die nicht aus Bundes- oder anderen Landesmitteln gefördert wurden. Ebenso konnten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die Errichtung, Erweiterung, Instandsetzung, Einrichtung von Bauten und Räumen und die Ausstattung mit Lehr- und Arbeitsmitteln bezuschußt werden. Diese Richtlinie stellte eine wesentliche Zäsur in der Entwickl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ar, wurden doch mit den Richtlinien zur Gewährung von Landes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erste rahmenrechtliche Bedingungen geschaffen und Möglichkeiten für die Entwicklung der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kreiert.

Am 2. September 1991 leitete die Regierung des Landes Sachsen-Anhalt dem Landtag den Entwurf ein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 Sachsen-Anhalt zu. Die Fraktion der SPD tat ein Gleiches am 25. September 1991 mit einem Entwurf ein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er als eigenständiger Antrag in Anhörungen behandelt wurde. Am 27. September 1991 wurde dann zu einer Anhörung zum Weiterbildungsgesetz in den Landtag von Sachsen-Anhalt eingeladen, deren Grundlage der aktuelle Diskussionsstand des CDU-Arbeitskreises zum Regierungsentwurf war. Die endgültige Fass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EBG) wurde dann am 25. Mai 1992 nach Verabschiedung durch den Landtag des Landes Sachsen-Anhalt veröffentlicht und trat somit in Kraft. Es löste damit die Richtlinien zur Gewährung von Landes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vom 1. Juli 1991 ab.

Di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des Landes Sachsen-Anhalt wurden relativ frühzeitig, d.h. schon im Jahre 1992, in die Erarbeitung der nachfolgenden Rechtsvorschriften einbezogen. Bereits am 4. Februar 1993 konstituierte sich der Landesausschuß für Erwachsenenbildung, Beratungsorgan der Landesregierung in Fragen der Weiterbildung, dem Vertreter der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des Landes, der kommunalen Spitzenverbände und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ngehörten. Der Landesausschuß für Erwachsenenbildung gab sich eine Geschäftsordnung, die vom Kultusminister am 26. Mai 1993 bestätigt wurde. In den Beratungen des Landesausschusses für Erwachsenenbildung zeigte sich ein großer Konsens zu folgenden Problembereichen:

1. Es herrschte Übereinstimmung, daß eine notwendige Grundförderung für die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als unabdingbare Voraussetzung für die Entwicklung pluralistischer Strukturen in der Erwachsenenbildung erforderlich ist.

2. Neben einer Grundförderung zu den Personalkosten- und den Sachkosteneinrichtungen wurde es als notwendig erachtet, die laufende Unterrichtsarbeit durch das Land Sachsen-Anhalt in den Bereichen allgemeine Bildung, politische und kulturelle Bildung vornehmen zu lassen.
3. Konsens herrschte im Landesausschuß auch darüber, daß ein einheitliches Anerkennungsverfahren für förderungsfähig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einzuführen sei.

In mehreren Beratungen nach dem 4. Februar 1992 wurde schließlich ein tragfähiger Konsens der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mit der Politik des Kultusministeriums erzielt. Nachdem di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Erwachsenenbildungsgesetz und die Richtlinien zur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gem. § 6 EBG sowie die Richtlinie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für Investitionen der Modellvorhaben gem. § 7 EBG in die Mitzeichnungsfassung der Ministerien gingen, wurde die Tätigkeit des Landesausschusses bei der Konsensbildung zu diesen nachfolgenden gesetzlichen Regelungen zum Erwachsenenbildungsgesetz ausgeblendet.

Am 16. September 1993 wurde dann im Ministerial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die Veröffentlichung der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VO-EBG), der Richtlinie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zur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gem. § 6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er Richtlinie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für Investitionen, Lehrmittel und Modellvorhaben gem. § 7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und der Verwaltungsvorschrift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vorgenommen.

Diese nachfolgenden Regelungen zum Erwachsenenbildungsgesetz führten eine Reihe neuer Aspekte in die Förderungspolitik des Landes ein. Von maßgebender Bedeutung dabei war das Verfahren zur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das seinen Niederschlag in der Verwaltungsvorschrift fand. Die Förderpolitik der Landesregierung richtet sich generell auf die Schaffung von pluralen Strukturen in der Erwachsenenbildung des Landes. Relativ günstig für di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gestaltete sich die Grundförderung nach § 5 des Erwachsenenbildungsgesetzes, das eine förderungsfähige Bezuschussung der Personalkosten und der Sachkosten vorsieht. Das Land gestaltet die Förderung der Personalkosten nach folgenden Kriterien:

- Für landesweite Zusammenschlüsse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deren Mitglieder die Anerkennungsvoraussetzungen erfüllen, beträgt die Förderungsquote der Personalkosten für eine hauptberufliche pädagogische Leiterstelle entsprechend der Vergütungsgruppe (höchstens Vergütungsgruppe IIa BAT-Ost) 80 v. H. und für eine Verwaltungskraft der entsprechenden Vergütungsgruppe (höchstens Vergütungsgruppe VIb BAT-Ost) 100 v. H.

- Für Leiter und das pädagogische Personal der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beträgt die Förderungsquote 70 v. H., für Verwaltungs- und Wirtschaftspersonal 50 v. H., die förderungsfähigen Personalkosten werden gebunden an einen Stellenschlüssel, der sich an einem Mindestarbeitsumfang in Unterrichtsstunden pro Jahr ausdrückt. Dieser Stellenschlüssel ist wesentlich günstiger gestaltet, als das in den Richtlini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von 1991 der Fall war.

Die Förderung der Sachkosten ist relativ niedrig. Sie beträgt 1,50 DM je Unterrichtsstunde. Dies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bezieht sich auf die Aussagen des Erwachsenenbildungsgesetzes im § 5, der eine Grundförderung der Personalkosten und Sachkosten als Verpflichtung des Landes vorsieht. Wesentlich ungünstiger gestalteten sich die Regelungen der Richtlinie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zur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gem. § 6 EBG. In den Aussagen zu Art, Umfang und Höhe der Zuwendungen heißt es: „Für die laufende Bildungsarbeit beträgt der anteilige Zuschuß durch den Zuwendungsgeber 10 DM je Unterrichtsstunde. Mit der Gesamtförderung nach EBG darf höchstens Kostendeckung erreicht werden, wobei die förderungsfähige Kostenhöhe 40 DM je Unterrichtsstunde beträgt.“ Da das Land im EBG die Förderung der laufenden Bildungsarbeit nur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zu fördern bereit war, wird der vorher genannte Punkt restriktiv gehandhabt. Auch die Richtlinie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für Investitionen, Lehrmittel und Modellvorhaben ist nur im Rahmen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Haushaltsmittel des Landes anwendbar.

Von den hier genannten Durchführungsverordnungen und Richtlinien ist nur eine zeitlich begrenzt. Das ist di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DVO-EBG), die mit Ablauf des 31. Dezember 1995 außer Kraft tritt. Es wird also die Aufgabe der Landesregierung und ihres Beratungsorgans, des Landesausschusses für Erwachsenenbildung, sein, im Laufe des Jahres 1995 eine neue Durchführungsverordnung zu entwickeln. Während im Erwachsenenbild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sich die Förderung stets auf allgemeine, kulturelle und politische Bildung richtet, sieht das Erwachsenenbildungsgesetz zur beruflichen Bildung verschiedene, sich teilweise widersprechende Aussagen vor. Obwohl im Erwachsenenbildungsgesetz die berufliche Bildung nicht eindeutig von der Förderung ausgeschlossen ist, werden Maßnahmen der beruflichen Bildung, sofern sie nicht durch Drittmittel gefördert werden, teilweise von der Förderung durch das Land ausgeschlossen. Das ist um so schmerzlicher, als die soziale Situation der Bürg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sbesondere diesen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als notwendig anerkennt. Gegenwärtig werden nach Veröffentlichung der nachfolgenden Regelungen zum Erwachsenenbildungsgesetz erste Erfahrungen in dessen Anwendungen gesammelt. Von besonderer Brisanz ist dabei das Verfahren zur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der Einrichtungen. Seit Inkrafttreten der Verwaltungsvorschrift zum Erwachsenenbildungsgesetz sind

wesentliche Punkte des Anerkennungsverfahrens immer wieder Gegenstand von Beratungen des Kultusministeriums und des Landesausschusses für Erwachsenenbildung gewesen. Der bürokratische Aufwand zur Anerkennung der Förderungsfähigkeit übersteigt oftmals die Verwaltungskraft der Einrichtungen. Gleiches gilt für die Abrechnung bzw. Beantragung der Mittel für die Grundförderung entsprechend § 5 EBG. Hier suchen Landesausschuß und Kultusministerium nach vereinfachenden Regelungen.

Bedeutsam ist, daß die Landesregierung der Forderung des Gesetzgebers im § 13 EBG am 14. September 1993 nachgekommen ist und einen Bericht über den Vollzug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dem Landtag zugeleitet hat. Der Bericht der Landesregierung geht in seinen Prämissen von gegenwärtigen und künftigen Strukturen im Lande Sachsen-Anhalt aus, und di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werden mit ihren grundsätzlichen Bildungskonzeptionen, ihrer Organisationsstruktur, ihren Angeboten an Bildungsleistungen und den Problemlagen aus der Sicht ihrer Einrichtungen vorgestellt. Dieser Bericht umfaßt weiterhin eine Übersicht der Bildungsleistungen in Sachsen-Anhalt und der Förderung durch die Landesregierung in den Jahren 1991/92. In einem kurzen Abschnitt werden die Tätigkeit des Landesausschusses für Erwachsenenbildung dargestellt sowie Perspektiven zukünftiger Erwachsenenbildung im Lande Sachsen-Anhalt aufgezeigt. Sichtbar wird, daß Mängel der Gesetzeslage von der Landesregierung erkannt werden und nach Möglichkeiten einer Lösung im Rahmen von Novellierung des Erwachsenenbildungsgesetzes gesucht wird. Da es im Lande Sachsen-Anhalt kein Bildungsurlaubsgesetz gibt, sind insbesondere die Entwicklungsmöglichkeiten für Heimvolkshochschulen zur Zeit eingeschränkt. Die öffentliche Weiterbildungspolitik tendiert in starkem Maße in zwei Richtungen:

1. Die erste Richtung spiegelt sich in dem gegenwärtigen Erwachsenenbildungsgesetz und seinen Nachfolgebestimmungen wider. Es wird nach einem Regelwerk gesucht, das den bildungspolitischen Anforderungen der neunziger Jahre gerecht wird und handhabbar und überschaubar ist.
2. Die zweite Richtung ist eine zur Zeit noch wenig ausformulierte Handhabbarkeit des Erwachsenenbildungsgesetzes und seiner Richtlinie. So kommt es insbesondere in der Förderung zu Irritationen der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die deren Arbeit in starkem Maße beeinflußt und zum Teil einschränkt. Bei den kommunal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das sind vor allem die zur Zeit bestehenden 41 Volkshochschulen des Landes Sachsen-Anhalt, wird es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sein, wie die Regelungen, die nach der Gebietsreform dieses Jahres greifen, sich auf ihre Perspektiven der Arbeit auswirken. Da mit der Fusionierung von Landkreisen zu größeren kommunalpolitischen Einheiten auch die Durchsetzung neuer Verwaltungsstrukturen verbunden ist, kann damit gerechnet werden, daß die Volkshochschularbeit der gegenwärtig 41 Volkshochschulen entweder in neuer Trägerschaft oder aber in dezentralisierter Form weitergeführt wird.

Zusammenfassend kann festgestellt werden:

- Das Land Sachsen-Anhalt hat sehr frühzeitig durch Schaffung von Förderungsvoraussetzungen das Recht auf Weiterbildung als Bestandteil des Grundrechts der freien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urch seine Tätigkeit untermauert. Durch die Schaffung von gesetzlichen Vorschriften wird der Erwachsenenbildung ein besonderer Stellenwert in der Weiterbildungspolitik des Landes zugemessen. Im Vergleich der neuen Bundesländer hat das Land Sachsen-Anhalt die Spitzenposition bei der Schaffung der finanziellen und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die Erwachsenenbildung eingenommen.
- Entstanden ist eine Vielzahl von gleichberechtigten Bildungseinrichtungen mit einem umfangreichen Angebot von Bildungsleistungen im Bereich der allgemein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Bildung. Dieser Prozeß wird noch andauern, sind doch insbesondere die konzessionierten Bildungseinrichtungen mit ihrer Aufbauarbeit zwar vorangekommen, aber längst noch nicht am Ende dieses Prozesses. Trotz Förderung durch das Land Sachsen-Anhalt müssen sich die Bildungseinrichtungen vor dem Hintergrund der Tatsache bewähren, daß die sich stets wandelnden Bildungsbedürfnisse der Erwachsenen eine Größe darstellen, die im Gleichgewicht mit dem Angebot an Bildungsleistungen und den zur Verfügung gestellten Fördermitteln in Einklang stehen muß.

Letztendlich ist festzustellen, daß sich di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bei sozial vertretbaren Teilnehmergebühren nicht aus eigener Kraft finanzieren können, d.h., ohne die Gewährung von Landes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Erwachsenenbildung sind die gegenwärtigen und zukünftigen Aufgaben nicht lösbar. Vor dem Hintergrund der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wächst auch im Land Sachsen-Anhalt die Zahl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die Erwachsenenbildung als unentbehrlichen Bestandteil von Lebensqualität begreifen und die Angebote der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wahrnehmen. Gleichwohl bleibt festzustellen, daß im Konzept der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des Landes die 41 Volkshochschulen den maßgeblichen Teil des Angebotes von Weiterbildung darstellen.

Von dem im Jahre 1992 abgerechneten förderungsfähigen Maßnahmen der Erwachsenenbildung nach Erwachsenenbildungsgesetz konnte der Landesverband der Volkshochschulen insgesamt 84,7 % der entsprechenden abgerechneten Gesamtleistungen im Land verwirklichen. Die Kluft zwischen Leistungsfähigkeit und Förderung der Volkshochschulen ist aber noch nicht geschlossen, denn für die 84,7 % Leistungen gab es nur 29,5 % der Gesamtförderung im Lande Sachsen-Anhalt.

## **Erwachsenenbildung im Freistaat Thüringen**

### **Vorbemerkungen**

Erwachsenenbildung hat im Bildungswesen des Freistaats Thüringen einen bedeutenden Stellenwert. In der Erwachsenenbildung als vierter Säule des Bildungswesens ist eine kontinuierliche Entwicklung zu verzeichnen. Die nach dem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gesetz (ThEBG) anerkannten förderungsberechtigt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sichern ein plurales, flächendeckendes Angebot a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der allgemeinen, politischen, kulturellen, künstlerischen und beruflichen Bildung.

### **Rechtliche Grundlagen**

Im April 1992 wurde vom Thüringer Landtag das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gesetz (ThEBG) beschlossen. Damit wurden die rechtlichen Grundlagen für die Erwachsenenbildung in Thüringen geschaffen. Thüringen war somit das erste neue Bundesland, welches über ein Erwachsenenbildungsgesetz verfügte.

Im September 1992 wurde die Thüringer Verordnung zur Förderung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ThürEBFVO) durch den Thüringer Kultusminister erlassen.

Bereits im August 1992 konstituierte sich das Landeskuratorium für Erwachsenenbildung. Der Thüringer Kultusminister berief 15 stimmberechtigte Mitglieder und 29 Mitglieder mit beratender Stimme.

Die Verwaltungsvorschrift des Thüringer Kultusministeriums für das Anerkennungsverfahren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nach dem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gesetz sowie zu den Auszahlungsmodalitäten, Leistungs- und Verwendungsnachweisen nach der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förderungsverordnung trat im Januar 1994 in Kraft.

### **Ziele und Aufgaben**

Die Erwachsenenbildung in Thüringen soll durch ein anspruchsvolles und flächendeckendes Angebot dazu beitragen, Bildungsdefizite abzubauen; sie soll die Vertiefung und Ergänzung vorhandener oder den Erwerb neuer Kenntnisse, Fähigkeiten und Qualifikationen ermöglichen und zu selbständigem, eigenverantwortlichem Handeln im persönlichen, beruflichen und öffentlichen Leben befähigen.

Die allgemeine Erwachsenenbildung soll das selbständige und verantwortliche Urteil fördern und zur geistigen Auseinandersetzung anregen. Die kulturelle Erwachsenen-

bildung soll zur Beschäftigung mit der eigenen Kultur anregen, der Identitätsfindung dienen und zum Erhalt wichtiger kultureller Werte beitragen. Die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 soll die Fähigkeit und Bereitschaft fördern,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Zusammenhänge zu beurteilen, sowie die Bereitschaft wecken, Aufgaben in Staat und Gesellschaft wahrzunehmen. Dabei sollen Maßnahmen der Erwachsenenbildung das Verständnis zwischen den Bundesländern und zwischen den Nationen fördern sowie Kontakte ihrer Bewohner herstellen helfen. Die künstlerische Bildung erweitert die ästhetische Urteilsfähigkeit, regt die kreativ-künstlerische Selbsttätigkeit an und erweitert damit die Voraussetzungen zur eigenen Freizeitgestaltung. Die berufliche Erwachsenenbildung soll die beruflichen Kenntnisse und Fertigkeiten erhalten und erweitern. Sie dient der Wiedereingliederung Arbeitsuchender in das Berufsleben, dem Übergang in eine andere berufliche Tätigkeit und der Sicherung des vorhandenen Arbeitsplatzes. Die Erwachsenenbildung soll auf allen Gebieten die Gleichberechtigung von Frau und Mann berücksichtigen.

###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und deren Förderung nach dem ThEBG**

Gegenwärtig sind in Thüringen 37 Volkshochschulen, 2 Heimvolkshochschulen und 11 freie Träger als förderungsberechtigt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nach dem ThEBG anerkannt.

Von den Volkshochschulen wurden im Jahre 1992 253.902 und 1993 258.617 Unterrichtsstunden erbracht. Die freien Träger erreichten 1992 85.581 und 1993 103.690 Unterrichtsstunden. Von den Heimvolkshochschulen wurden 1992 6.812 und 1993 12.439 Teilnehmertage erbracht.

Das Land Thüringen gewährte für die anerkannt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1991 Fördermittel in Höhe von 2 Millionen DM, 1992 7 Millionen DM und 1993 9 Millionen DM. Für 1994 sind Fördermittel in Höhe von 14 Millionen DM zur Vergabe vorgesehen.

Mit der Schaffung der gesetzlichen Grundlagen und der Gewährung der Fördermittel für die anerkannt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hat der Freistaat Thüringen die notwendigen Rahmenbedingungen für eine effektive und erfolgreiche Bildungsarbeit in der Erwachsenenbildung geschaffen.



## **Die weiterbildungspolitische Situation in Thüringen**

### **1. Einleitung**

Die Wiedervereinigung zweier völlig entgegengesetzt entwickelter Wirtschaftsordnungen stellte die Deutschen vor Aufgaben ohne jegliche historische Vergleichbarkeit. Es gab keine Modelle, keine Erfahrungswerte, oft waren Improvisationen gefragt.

Die Umstellung der Wirtschaft auf die freie Marktwirtschaft sowie die Ausdehnung des bundesrepublikanischen rechtlich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Institutionsgefüges haben das gesellschaftliche Leb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 auch in Thüringen, in eine tiefe Krise gestürzt.

Die bisherige Weiterbildungspolitik konnte die neuen Aufgaben nicht mehr lösen. Die Weiterbildung war nun als soziales Integrationsinstrument und als ökonomischer Wandlungsfaktor gefragt. Dabei darf das Weiterbildungsangebot nicht dem Zufall überlassen werden. Es muß sichergestellt werden, daß die Menschen in unserem Land unabhängig davon, wo sie wohnen, und unabhängig davon, über wieviel Einkommen sie verfügen, a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teilnehmen können, die bedarfsgerecht und qualitativ sind. Dies ist ohne gesetzliche Regularien bzw. ohne feststehende Finanzierungsmöglichkeiten nicht realisierbar.

Thüringen war das erste neue Bundesland, welches ein eigenes Erwachsenenbildungsgesetz verabschiedete und dadurch der Notwendigkeit der Weiterbildung als Teil des öffentlichen Bildungswesens Rechnung trug.

### **2. Finanzierung der Weiterbildung**

„Wenn Weiterbildung als förderative Aufgabe ernst genommen und durch öffentliche Einrichtungen der Kommunen und anderer Träger erfüllt werden soll, bedarf sie der kontinuierlichen und systematischen Förderung auf gesetzlicher Grundlage“ (Rohmann 1991, S. 5).

Im weiteren beschränke ich mich auf di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die die allgemeinen Förderungsvoraussetzungen des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gesetzes (ThEBG) vom 23.4.1992 erfüllen.

Für die Erwachsenenbildung in Thüringen stellte das Land bereits im Jahr 1991 zwei Millionen DM als „Anschubfinanzierung“ zur Verfügung.

Im Spätsommer 1992 trafen sich die vom Kultusminister berufenen Mitglieder des Landeskuratoriums für Erwachsenenbildung zu ihrer ersten Tagung. Die zehn freien

Bildungsträger sowie die katholische und die evangelische Heimvolkshochschule werden seitdem durch je ein Mitglied und die 38 Volkshochschulen, die über 70 % des Bildungsaufkommens leisten, durch drei Mitglieder im Kuratorium vertreten.

Die ersten Kuratoriumssitzungen waren geprägt von der Erarbeitung einer Geschäftsordnung, von Diskussionen über die Anerkennung der Förderberechtigung und von der Ausarbeitung einer ersten Förderverordnung.

Für die anerkannten EB-Einrichtungen besteht nach § 9 ThEBG ein Rechtsanspruch auf Förderung durch das Land. Jedoch unterliegen alle Personal- und Sachkostenzuschüsse der Maßgabe des jährlichen Landeshaushaltes.

Bis 1993 erfolgte eine jährliche pauschalisierte Verteilung. Die jeweiligen Pauschalen sind im Landeskuratorium vor dem Erlaß diskutiert worden.

Trotz der Steigerung der finanziellen Zuwendungen des Landes für die Erwachsenenbildung von

1991 2 Mio. DM

1992 7 Mio. DM

1993 9 Mio. DM

reichten die Mittel nicht aus, um im vollen Umfang die im ThEBG und in der Förderverordnung festgeschriebenen Zuschüsse zu realisieren.

Um eine effektive Erwachsenenbildungsarbeit leisten zu können, muß den einzelnen Einrichtungen ein fixer Förderbetrag bekannt sein. Nach Meldung der geplanten Unterrichtsstunden bzw. -tage wurden jeweils in den ersten Kuratoriumssitzungen eines Jahres verschiedene Modellrechnungen besprochen. Dabei wurden Prioritäten gesetzt (Personalkosten vor Sachkosten) und Sachkostenpauschalen diskutiert. Oberstes Gebot war dabei die finanzielle Deckung der nach den Modellrechnungen erforderlichen Gelder durch den zur Verfügung stehenden Landeshaushalt.

Am 1.1.1994 trat die Verwaltungsvorschrift des Thüringer Kultusministeriums für die Anerkennung vo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nach dem ThEBG sowie zu den Auszahlungsmodalitäten, Leistungs- und Verwendungsnachweisen nach der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förderungsverordnung in Kraft. Damit liegen jetzt von den Antragsformulierungen bis zu den Auszahlungsmodalitäten exakte Rechtsvorschriften vor.

Da sich die Höhe der Fördermittel im jeweiligen Förderjahr auf die durchgeführten Unterrichtsstunden bzw. Teilnehmertage der vergangenen Berechnungsjahre bezieht, ist in Zukunft eine exakte Finanzplanung der förderungsberechtigten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möglich.

In Thüringen wurde besonders auf den Aufbau pluraler Erwachsenenbildungsstrukturen geachtet.

Jede Thüringer Volkshochschule ist, wie die verschiedenen freien Träger, als förderungswürdig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 anerkannt. Dagegen erhält der Thüringer Volkshochschulverband e.V. (TVV) zur Zeit nur nach § 10 des ThEBG, Mitarbeiterfortbildung, einen Landeszuschuß in Höhe der durchschnittlichen Zuwendungen der einzelnen Volkshochschulen. Das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gesetz vom 23. April 1992 enthält keine Vorschrift, die ausdrücklich die staatliche finanzielle Förderung von Landesorganisationen der Erwachsenenbildung ermöglicht.

In diesem Zusammenhang ist auf die im § 15 Abs. 2 ThEBG stehende Unterscheidung zwischen Landesorganisationen und Einrichtungen auf Landesebene, die im Gesetz nicht weiter erläutert wird, hinzuweisen.

Die Einrichtungen der freien Träger sind beides, nämlich Landesorganisationen und Einrichtungen auf Landesebene, ohne daß eine exakte Trennung der Funktionen vorgenommen werden kann. Für den Volkshochschulbereich ist die Situation anders, da der TVV nur die Funktion der Landesorganisation hat und sich nicht direkt an die Kursteilnehmer wendet.

Wegen dieser Ungleichbehandlung zwischen dem Thüringer Volkshochschulverband und den Landesorganisationen der freien Träger ist seit der Verabschiedung des ThEBG auch auf Ministerebene Schriftverkehr zu diesem Sachverhalt erfolgt. Der TVV hofft, daß in nächster Zeit die Gleichstellung bezüglich der Förderberechtigung per Gesetz erreicht wird.

Im Zusammenhang mit der Finanzierung sind einige Fakten der Thüringer Volkshochschulen im Bereich des Finanzhaushaltes interessant:

- Bei der Kurskalkulation wird im allgemeinen darauf geachtet, daß die Gebührentgelte in etwa den zu zahlenden Honoraren deckungsgleich sind.
- In der Förderverordnung des Landes ist die Mindestteilnehmerzahl für Kurse auf acht Teilnehmer festgelegt worden, was dem oben Genannten ungefähr entspricht.
- Ausstattung und baulicher Zustand der einzelnen Thüringer Volkshochschulen haben sich in den letzten Jahren merklich verbessert. Manche Volkshochschulen konnten im Zuge der Kommunalisierung eigene Geschäftsräume, sogar eigene Volkshochschulgebäude übernehmen. Modern ausgestattete Computer- und Schreibmaschinenkabinette sind heute keine Ausnahmen mehr.
- Auf der Grundlage des § 14 des ThEBG – „Die Schulträger staatlicher Schulen sollen den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geeignete Räume für Veranstaltungen sowie Lehr- und Arbeitsmittel zur Mitbenutzung überlassen“ – sind vor allem die kommunalen Volkshochschulen in der Lage, im jeweiligen Kreisgebiet Klassenräume und Sporthallen mietfrei zu nutzen. Dies fördert ein flächendeckendes, kostengünstiges Programmangebot.

### **3. Zur Gesetzeslage**

Wie eingangs dargestellt, existierten nach der Wende auch in Thüringen Gegebenheiten, die eine vollkommene Übernahme von Gesetzestexten der alten Bundesländer nicht zuließen. Die Volkshochschulen, die sich gerade im Veränderungsprozeß von staatlich gelenkten zu demokratisch geleiteten, kommunalen Einrichtungen befanden, und die im Aufbau befindlichen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hatten großes Interesse an einer Gesetzgebung zur Institutionalisierung und Förderung der allgemeinen Weiterbildung in Thüringen. Die rasche Verabschiedung des ThEBG durch den Landtag wurde deshalb, trotz schon damaliger Vorbehalte, allseits begrüßt.

Nach fast zweijähriger Arbeit mit dem ThEBG schätze ich ein, daß das vorliegende Erwachsenenbildungsgesetz für die allgemeine, politische, kulturelle, künstlerische und berufliche Weiterbildung eine Arbeitsgrundlage darstellt, die aber in der praktischen Umsetzung (Förderberechtigung des TVV) einige Unzulänglichkeiten aufzeigt. R. Rohlmann hat bereits auf einige Problemstellen der Gesetzesformulierung des ThEBG hingewiesen und die dadurch entstehenden Folgen erläutert (vgl. Rohlmann 1992, S. 43 ff.).

Die Thematik „Bildungsurlaub“ wurde auch in Thüringen in den verschiedensten Gremien, so auch im Landeskuratorium, mehrmals diskutiert. Ob es aber in der derzeitigen Rezession eine gesetzlich geregelte und finanziell abgesicherte Bildungsfreistellung in Thüringen geben wird, bleibt abzuwarten.

### **4. Träger-/Einrichtungssituation unter dem Aspekt öffentlicher Weiterbildungspolitik**

„Die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handeln in eigener Verantwortung, sie können durch freie oder öffentliche Träger errichtet und unterhalten werden“ (ThEBG § 3). Zur Zeit gibt es in Thüringen 49 nach dem ThEBG gefördert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davon 10 in freier Trägerschaft, 2 Heimvolkshochschulen und 37 Volkshochschulen.

Auf der Mitgliederversammlung des Thüringer Volkshochschulverbandes am 14.4.1993 in Friedrichroda wurde eine neue Satzung beschlossen, die nach der Kommunalisierung der Thüringer Volkshochschulen deren rechtliche Trägerschaft garantiert. In der Eröffnungsansprache zu dieser Tagung erklärte der Präsident des Thüringer Landkreistages die Notwendigkeit der Errichtung und Unterhaltung einer Weiterbildungseinrichtung in kommunaler Trägerschaft, die die Grundversorgung bezüglich der Erwachsenenbildung im Zuständigkeitsbereich der Gebietskörperschaft ermöglicht (nach § 5 des ThEBG).

Während dieser Mitgliederversammlung wurde außerdem die Diskussion über die weitere Existenz und die Aufgaben der Volkshochschulen in Thüringen nach Inkrafttreten des Thüringer Gesetzes zur Kreisgebietsreform entfacht, die derzeit noch nicht abgeschlossen ist.

Die Thüringer Volkshochschulen sind in den Jahr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sgesamt gesehen zu den wichtigste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für die Bevölkerung geworden, insbesondere durch die Qualität und die Breite ihrer Angebote und ihre Bürgernähe.

	Volkshochschulen	freie Träger	Anteil der VHS Gesamt-UE in %
1992	253.902 UE	85.581 UE	74,8
1993	260.350 UE	100.739 UE	72,1

Einschneidende Sparmaßnahmen durch die Gebietsreform dürfen nicht dazu führen, daß die Volkshochschulen in ihrer Existenz gefährdet oder so verändert werden, daß sie ihre Aufgaben nur noch in geringem Umfang erfüllen können. Gerade in Zeiten wirtschaftlicher Rezession und gesellschaftlicher Probleme sind die Volkshochschulen ein unentbehrlicher Stabilisierungsfaktor. Sie bieten Weiterbildung, Informationen, kreative Selbstverwirklichung und integrieren dabei die verschiedenen Bevölkerungsgruppen. Diese sozialpolitischen Aufgaben können nur öffentlich-rechtlich erfüllt werden, denn private Anbieter orientieren sich am Markt und an dem Prinzip des Profits.

Um diese Aufgaben in den Volkshochschulen effizient und innovativ realisieren zu können, bedarf es der Organisation einer effektiven Fort- und Weiterbildung nur durch den Landesverband. Andere notwendige Dienstleistungen, wie Beratung in Rechts- und Organisationsfragen, Management, Drittmittelfinanzierung oder Projekte, sind aufgrund der fehlenden Landesförderung des TVV nicht in Angriff zu nehmen. Zur Zeit koordiniert ein Vorstandsmitglied die anfallenden Aufgaben der Geschäftsstelle, andere Vorstandsmitglieder, die gleichzeitig hauptberufliche Volkshochschulleiter sind, übernehmen einen Teil der fachspezifischen Aufgaben und vertreten außerdem Thüringen in Fachgremien des Deutschen Volkshochschul-Verbandes. Hierbei wird nochmals die Unzulänglichkeit der Gesetzgebung gegenüber der Landesorganisation der Thüringer Volkshochschulen deutlich.

Die Erwachsenenbildungs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Thüringens haben sich in einer „Landesarbeitsgemeinschaft“ (LAG) zusammengeschlossen.

In den verschiedenen Regionen Thüringens existieren sehr differenzierte Kooperationsbeziehungen der einzelnen Volkshochschulen zu „Arbeit und Leben“, zur Arbeiterwohlfahrt, zu kirchlichen und zu paritätischen Bildungswerken oder zu Sportverbänden. Die gemeinsamen Maßnahmen dienen zum größten Teil dazu, dem schon

in der Präambel des ThEBG beschriebenen Bildungsbedarf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besonders im ländlichen Raum, noch effizienter zu entsprechen und bestimmte Zielgruppen (wie Arbeitslose, alleinstehende Frauen, Senioren oder Jugendliche) durch Weiterbildung so zu aktivieren, daß sie ihren Alltag lebenswert und sinnvoll gestalten können.

### **Literatur**

Rohlmann, Rudi: „Gesetzgebung zur Weiterbildung. Vergleichende Darstellung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in: Informationen und Beiträge für die Arbeit der Volkshochschu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I, Bonn 1991

Rohlmann, Rudi: „Gesetzgebung zur Erwachsenenbildung/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Informationen und Beiträge für die Arbeit der Volkshochschu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V, Bonn 1992

Thüringer Erwachsenenbildungsgesetz (ThEBG) vom 23.04.1992

체계적인 향상 교육 - 성공적 접근

1995 년

담당자 / 기관: 독일노동실무협회, 동서지역 조정기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 노동복지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의 위임을 받은 독일노동실무협회에 의해 1992 년에 세워진 동서지역 조정소의 업무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이 기관은 유럽사회기금(Europäische Sozialfonds)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지역 조정기관은 노동정책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구동독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의 고용지원원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노동실무협회는 임금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자리, 자격취득, 중개보조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원 및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사회적 기업에 있어 담당기관을 아우르는 연방차원의 연합단체이다. 동서지역 조정소 설립의 출발점은 구동독지역의 조건과 필요에 부합하며 임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동서지역조정소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통합모델로 발전하였다. 조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경험교류를 포함한 심포지엄, 계속교육 세미나, 실습 및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 중개,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프로젝트에 자문해 주는 것이다. 이 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담당 주 행정부처, 지역행정처, 경제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역 교육담당기관 및 조직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기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실업퇴치를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이런 활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업무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독일노동실무협회가 추구하는 고용지원기관의 유럽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도 동서지역 조정소의 초지역적 교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동서지역 조정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유럽의 다른 나라에 전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AG Arbeit e.V.







A R B E I T

##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rfahrungsaustausch  
Fortbildung  
Projektbetreuung**



# **Weiterbildung mit System**

## **Ein erfolgreiches Konzept**

### **Ein kurzer Rückblick**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gibt es seit 1992. Sie wurde von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Arbeit e.V.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eingerichtet und wird aus Mitteln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gefördert. Ihr Ziel ist es,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projek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wie andere auf diesem Gebiet tätige Institutionen beim Aufbau geeigneter arbeitsmarktpolitischer Strukturen zu unterstützen. Dies geschieht in Form von Fachtagungen und Seminaren sowie durch die Vermittlung von Experten und Praktika.

Das Büro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efindet sich im Ost-Berliner Bezirk Prenzlauer Berg, einem wirklichen "Brennpunkt des Geschehens". Die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realisieren kompetent, engagiert und flexibel ein innovatives Konzept der Weiterbildung und des Know-how-Transfers. Sie sind Ansprechpartner für Trägereinrichtungen und Akteure von Qualifizierung und Beschäft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

## **Der Träger**

Die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 V. ist die bundesweite trägerübergreifende Dachorganisation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projekten sowie anderer sozialer Betriebe, die lohnsubventionierte Arbeitsplätze, Qualifizierung und Vermittlungshilfen anbieten. Die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kommen u. a. aus Verbänden der freien Wohlfahrtspflege sowie dem Bereich kommunaler und regionaler Beschäftigungsförderung. Die "alteingesessenen" Mitglieder aus Westdeutschland und die neuen Mitglieder aus den östlichen Bundesländern bieten ihr zum Teil langjähriges Erfahrungswissen über die Wiedereingliederung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von anderen am Arbeitsmarkt benachteiligten Perso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Orientierung an.



## **Ein integratives Modell der Wissensvermittlung**

Ausgangspunkt bei der Schaffung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war die Überlegung, daß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sehr spezieller, an den dortigen Erfordernissen und Bedingungen orientierter Bedarf an Unterstützung und Koordination beim Aufbau und bei der Gestaltung eines leistungsfähigen Netzes von Trägern lohnsubventionierter Arbeitsplätze besteht. Das Leistungsangebot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richtet sich daher a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projekten in mittleren und höheren Führungspositionen, die Beschäftigungsmaßnahmen für Langzeitarbeitslose planen, umsetzen und weiterentwickeln.

Für diesen Personenkreis hat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in neues integratives Modell der Wissensvermittlung entwickelt. Seine Elemente sind Fachtag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Fortbildungsseminare, die Vermittlung von Praktika und einer befristeten Betreuung und Umsetzungsberatung für Projekte durch erfahrene Experten direkt vor Ort. Diese Leistungsangebote sind systematisch aufeinander abgestimmt, d. h., Know-how-Transfer und Qualifizierung erfolgen themenspezifisch in den genannten unterschiedlichen Formen. Die Inhalte betreffen das gesamte Spektrum des Wissens, das man zur Führung von Unternehmen des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ssektors benötigt - angefangen bei Förderinstrumenten und den Fragen der Finanzierung über Probleme der Produktentwicklung und des Marktzugangs bis hin zur Qualifizierung, Betreuung und sozialpädagogischen Begleitung der Beschäftigten.



## **Standortvorteil durch regionale Einbindung**

Tragender Gedanke aller Anstrengunge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st die regionale Einbindung. Überzeugt davon, daß der durch regionale Akzeptanz und Integration gewonnene Standortvorteil entscheidende Grundlage erfolgreichen Wirkens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st, trägt die Arbeit der Koordinie-

rungsstelle Ost-West dazu bei, in diesem Sinne Kontakte zu fördern. Alle Veranstaltungen finden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zuständigen Landesministerien, Kommunalverwaltungen, Wirtschaftsverbänden, mit regionalen Bildungsträgern und Strukturentwicklungseinrichtungen statt.

So ergänzt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gezielt und erfolgreich die Aktionen zur Bekämpfung von Arbeitslosigkeit auf Bundesebene. Inzwischen verfügt sie über verzweigte und gut funktionierende regionale Verbindungen sowie die Standortkenntnisse für wirklich paßgerechte Fortbildungskonzepte.

Mit Fug und Recht läßt sich heute sagen, daß sich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als Vermittlerin für das Fachwissen und die spezifischen Handlungskompetenzen, die zur Führung und Organisation von Beschäftigungsprojek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braucht werden, bewährt hat.

□□□

## **Europa im Blickfeld**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st ständig dabei, ihre Leistungsangebote auf der Basis der gesammelten Erfahrungen und entsprechend den veränderten Rahmenbedingungen zu aktualisieren und zukunftsorientiert auf neue Aufgabenfelder auszudehnen.

Dabei komme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auch die Ergebnisse der fachlichen Arbeit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zugute. Dies zeigt sich ganz besonders in der Ausdehnung des Handlungsfeldes auf die europäische

Ebene. Die verbandlichen Aktivitäten der BAG Arbeit zur Schaffung eines europäischen Netzwerkes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können unmittelbar für den vo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angebotenen transnationalen Erfahrungsaustausch genutzt werden.

Mit diesem neuen Leistungsangebot will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Fachwissen und Detailkenntnisse über die Praktiken zur Beschäftigungsförderung in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vermitteln, Denkprozesse im Rahmen des "europäischen Horizonts" befördern und einer Annäherung dieses Fachbereichs auf europäischer Ebene den Weg öffnen.

□□□

## **Erfahrenes Ausbildungs- und Betreuungspersonal**

Bei der Umsetzung der Tagungs- und Fortbildungsangebote arbeitet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mit erfahrenem Ausbildungs- und Betreuungspersonal zusammen, viele davon übrigens aus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Die Dozenten vereinen eine solide Ausbildung und gesichertes Wissen mit einer breiten Palette von fachlichen Erfahrungen und methodisch-didaktischen Fähigkeiten in der Erwachsenenbildung. Viele von ihnen sind durch ihre eigene Tätigkeit in einer Beschäftigungseinrichtung mit den dort auftretenden Alltagsproblemen bestens vertraut. So können sie an die beruflichen Erfahrungen und Kenntnisse der Veranstaltungs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nknüpfen und diese praxisbezogen weiterentwickeln.

**Nachstehend unsere Leistungen im einzelnen:**

##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e. V.

### **Fachveranstalt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Fachveranstalt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auf nationaler Ebene spielen im Leistungsangebot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ine besondere Rolle. In den ersten Jahren stand hier naturgemäß die Vermittlung des "Gewußt-Wie" von westdeutschen Beschäftigungsträgern im Mittelpunkt.

Inzwischen haben sich in Ostdeutschland die Voraussetzungen für den Erfahrungsaustausch und auch die Erwartungen seitens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pürbar verändert. Der Know-how-Transfer ist längst keine Einbahnstraße mehr, auch Projektvertreterinnen und -vertreter aus Ostdeutschland sind inzwischen wichtige Erfahrungsträger, die ihr Wissen den Kolleginnen und Kollegen aus der vielgestaltigen Träger- und Projektlandschaft des lohnsubventionierten Arbeitsmarkt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Orientierung anbieten.

Die Fachveranstalt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richten sich a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n, sozialen Betrieben, ABS-Gesellschaften sowie anderen Einrichtungen und Initiativen des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ssektor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fahrene Praktik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ergänzen den Teilnehmerkreis und gewährleisten den Erfahrungsaustausch zwischen Ost und West.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bündelt die Anregungen der Veranstaltungsteilnehmer, analysiert den geäußerten Unterstützungs- und Informationsbedarf der Projekte in den neuen Ländern und entwickelt auf dieser Grundlage neue, bedarfsgerechte Fortbildungsangebote, die die im Erfahrungsaustausch grundsätzlich behandelten Fachthemen vertiefen und festigen.

Ganz im Sinne des europäischen Entwicklungsprozesses ist der Erfahrungsaustausch seit 1995 auf die transnationale Ebene ausgedehnt worden. Projektvertreter aus dem europäischen Ausland stellen ihre Erfahrungen ebenfalls zur Diskussion, berichten von den Besonderheiten, Erfolgen und Schwierigkeiten bei ihrer Arbeit, Langzeitarbeitslose und andere von sozialer Ausgrenzung Bedrohte wieder in die Gesellschaft und in den Arbeitsprozeß zu integrieren.

Die Tagungen und Seminare mit Erfahrungsaustausch bieten Gelegenheit zum intensiven Gespräch. Sehr konkret werden hier Fachfragen mit Praktikern erörtert, wird in Arbeitsgruppen anhand beispielhafter Problemlösungen diskutiert. Die Themen werden entweder in Form von Referaten und Vorträgen oder in Arbeitsgruppen behandelt. Podiumsdiskussionen mit Experten ergänzen das Programm.

Jedes Seminar hat einen besonderen Themenschwerpunkt, der sowohl dem aktuellen Handlungsbedarf der Projekte als auch den regionalen Besonderheiten Rechnung trägt. Gerade weil es den Veranstaltern um die bessere Einbeziehung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as lokale Politikfeld und die regionale Wirtschafts- und Strukturentwicklung geht, werden die Ver-

anstaltungen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zuständigen Behörden und Einrichtungen auf regionaler, lokaler und sonstiger Ebene organisiert. Pro Jahr finden bis zu zwölf ein- oder mehrtägige Veranstaltungen für jeweils rund 40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statt.

Konkret, praxisbezogen und regional eingebunden, sind die Fachtag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die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anbietet, auf die Wünsche der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bgestimmt. Die Veranstaltungen werden in der Rege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geführt. In Verbindung mit ausgewählten Projekt- und Werkstättenbesichtigungen werden auch Tag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organisiert.

Dieser Rahmen bietet die Möglichkeit für vielfältige fachliche Kontakte, deren Weiterführung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urch ihr Angebot der Projektbetreuung unterstützt: Experten aus Mitgliedseinrichtungen der BAG Arbeit können durch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zur Betreuung und Umsetzungsberatung von Beschäftigungsprojekten vor Ort vermittelt werden.

Die Leistunge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werden durch das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unterstützt und aus Mitteln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gefördert. Für die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der Fachtag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fallen nur geringe Teilnahmegebühren an. Bei Veranstaltung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besteht die Möglichkeit, Fahrtkostenzuschüsse zu erhalten.

□□□

**Die Veranstaltungen sind auf die Probleme  
und auf die besondere Situation von Beschäftigungs-  
gesellschaften und sozialen Betrieb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geschnitten**

Hier einige Themen im Überblick:

- Aufgaben und Funktion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 arbeits- und förderrechtliche Rahmenbedingungen;
- Finanzierungsstrategien;
- neue Beschäftigungsfelder für die Zielgruppen der Arbeitsmarktpolitik;
- Instrumente zur sozialen Betreuung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Sozialhilfeempfängern;
- Angebote zur Qualifizierung und Vermittlung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Sozialhilfeempfängern.

**Auf Wunsch erhalten Sie gern unsere  
Einladungsprospekte. Schreiben Sie uns!**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 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Telefon: 030-449 69 74, Fax: 030-449 69 76**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AG Arbeit e. V.**

## **Zwei berufsbegleitende Fortbildungsreihen**

Der tiefen Beschäftigungskrise, die durch den ostdeutschen Strukturumbbruch ausgelöst worden ist, wird nach wie vor mit massiven arbeitsmarktpolitischen Interventionen entgegengewirkt. Ein dichtes Netz von Projekten und Einrichtungen mit lohnsubventionierten Arbeitsplätzen is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tstanden. Die Arbeitsbedingungen dieser Betriebe und die professionellen Anforderungen an deren Mitarbeiter sind vielfältig und verändern sich ständig.

Hier bietet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ine spezielle *Fortbildungsreihe zum Projekt- und Sozialmanagement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der neuen Bundesländer an. Die Fortbildung richtet sich a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die in den Projekten in einer leitenden Funktion tätig sind bzw. eine solche Funktion anstreben.

Eine zweite Fortbildungsreihe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wendet sich an das Leitungs- und Betreuungspersonal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ie müssen - um die Arbeitsmarktchancen der Beschäftigten zu erhöhen - ihre fachliche Anleitung mit gezielter sozialpädagogischer Beratung und Betreuung koppeln.

Hier besteh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ach wie vor Nachholbedarf, denn Sozialarbeiter und Sozialpädagogen wurden dort früher nicht ausgebildet. Erfahrungen im Umgang mit Langzeitarbeitslosen und Sozialhilfeempfängern sind in d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der neuen Bundesländer noch nicht sehr ausgeprägt. Die fachlichen Anleiter benötigen daher häufig - in Ergänzung ihres Fachwissens - eine zielgruppenorientierte sozialpädagogische Zusatzqualifikation.

Genau da knüpft die *Fortbildungsreihe Sozialpädagogische Betreuung bei der Beschäftigung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Sozialhilfeempfängern* an. Sie verfolgt das Ziel, die Handlungsgrundlagen für die komplexen Anforderungen an Anleiter in Beschäftigungsprojekten zu verbessern.

Beide Fortbildungsreihen vermitteln sehr problem- und praxisnah das nach Handlungsbereichen differenzierte Grundlagenwissen, das für die Führung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projekten gebraucht wird.

Die Kurse werden entweder geschlossen für einen feststehenden Teilnehmerkreis in einer Region oder als Einzelveranstaltungen länderübergreifend angeboten. Sie sind nach dem Block-Modul-System gestaltet, deren einzelne Bildungsbausteine beliebig und je nach Bedarf miteinander kombiniert und auch einzeln zertifiziert werden können. Die Kursteilnahme schließt die Möglichkeit eines organisierten, betreuten und ebenfalls zertifizierten Praktikums in einer erfahren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 ein.

Geleitet werden die Seminare durch jeweils zwei Dozenten mit der erforderlichen Fach- und Methodenkompetenz. Ein Kurs umfaßt 20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lle Lernschritte erfolgen in einer offenen und konstruktiven Seminaratmosphäre.

Grundlegender Bestandteil des Lehrens und Lernens ist das Anknüpfen und die Einbeziehung von beruflichen und Alltagserfahrungen der Teilnehmer sowie die moderatorische Aufbereitung von Anleitungs-, Betreuungs- und Beratungssituationen.

Zur weiteren Vertiefung und vor allem zur praktischen Umsetzung der in der Fortbildung erworbenen Kenntnisse im eigenen Projekt kan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ine zeitlich befristete kostenlose Projektbetreuung durch Experten vor Ort vermitteln.

Für die Fortbildungsangebote wird eine Teilnahmegebühr erhob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projekte, die mehr als vier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zu einem Seminar bzw. zu einer Seminarreihe anmelden, erhalten eine Ermäßigung.

Auf Wunsch bieten wir beide Fortbildungsreihen auch als maßgeschneidertes betriebs- bzw. projektinternes Seminar mit einem speziell kalkulierten Preisangebot an.

Die aktuellen Seminargebühren erfragen Sie bitte i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

**Wünschen Sie weitere Informationen?  
Wir beraten Sie gern. Schreiben Sie uns!**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 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Telefon: 030-449 69 74**

**Fax: 030-449 69 76**

**Nachstehend finden Sie eine Übersicht über die  
einzelnen Module der beiden Fortbildungsreihen:**



## **1. Projekt- und Sozialmanagement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der neuen Bundesländer**

### Module

- Regionaler Arbeitsmarkt und Beschäftigungschancen für Langzeitarbeitslose und schwervermittelbare Personen
-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er Marktwirtschaft
- Beschäftigungsfelder für Zielgruppen des Arbeitsmarktes
- Instrumente der Beschäftigungsförderung
- Rechtsgrundlagen: Haushalts- und Zuwendungsrecht
- Finanzierungsstrategien
- Rechtsgrundlagen: Steuer- und Gemeinnützigkeitsrecht
- Finanzplanung
- Rechnungswesen und Buchführung
- Führen und Leiten
- Arbeits- und Tarifrecht
- Personalentwicklung
- Organisationsentwicklung - ein schwieriges Unternehmen
- Erfolgsfaktor: Unternehmensstruktur

## **2. Sozialpädagogische Betreuung bei der Beschäftigung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Sozialhilfeempfängern**

### Module

- Arbeitsmarktentwicklung und Beschäftigungsstruktur in den BQG der neuen Bundesländer
- Die Zielgruppen der Arbeitsmarktpolitik: spezifische Lebenslagen und Beschäftigungschancen
- Rechte, Pflichten und Leistungsansprüche von Zielgruppenbeschäftigten gegenüber den Trägern und rechtliche Grundlagen der Arbeit der Anleiter
- Angebote zum Ausgleich der Defizite unterschiedlicher Zielgruppen - eine Übersicht
- Rolle und Methodik von Sozialpädagogik in der Arbeit mit den Zielgruppen des Arbeitsmarktes - Beratungskompetenz
- Methodik und Didaktik von Lernprozessen - Lehren und Lernen
- Planung und Gestaltung von Beschäftigung, Qualifizierung und sozialpädagogischer Betreuung
- Grundlagen der Personalentwicklung bei der Beschäftigung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Sozialhilfeempfängern
- Der Anleiter im Vermittlungsprozeß von qualifizierender Beschäftigung und Betreuung

## **Projektbetreuung vor Ort Kompetente Unterstützung auf Zeit**

Das Leistungsangebot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umfaßt auch die zeitweilige Unterstützung eines Projektes durch einen erfahrenen Experten vor Ort. Gerade in komplizierten Situationen erweist es sich oft als hilfreich, wenn ein Fachmann mit der nötigen Umsetzungskompetenz direkt im Arbeitsalltag hilfreiche Tips und Ratschläge vermittelt.

Wie schreibe ich eine Projektkonzeption? Was ist bei einem Förderantrag zu beachten? Welche Marktchancen haben meine Produktideen? Wie gestalte ich die soziale Betreuung? Welche Software brauche ich für mein Rechnungswesen? Wie sichere ich Akzeptanz in meinem regionalen Umfeld?

Gemeinsam mit dem Experten - häufig aus einer "gestandenen" Mitgliedseinrichtung der BAG Arbeit e. V. - kann man nach Lösungswegen für diese und andere Probleme suchen und Handlungsbedarf erkennbar machen.

Diese projektorientierte Beratung und Betreuung auf Zeit rundet die Fortbildungsangebote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ganz gezielt ab. Durch die individuelle Unterstützung können auch ganz

spezielle Fragen erörtert, eigene Defizite sichtbar gemacht und paßgerechte innovative Lösungswege, zum Beispiel zur Existenzsicherung und -weiterentwicklung, der Rat suchenden Einrichtung gefunden werden.

Di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verfügt inzwischen über einen Expertenpool für unterschiedliche Betreuungsfelder wie Produkt- und Marktanalyse, Erschließung neuer Arbeitsfelder, Personal- und Organisationsentwicklung, Finanzierungs- und Förderinstrumentarien und den Aufbau von Kooperationen.

□□□

### **Hilfe erwünscht - was ist zu tun?**

Teilen Sie als erstes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hren Unterstützungsbedarf in einem formlosen Schreiben mit. Anschließend wird ein Vertreter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n Betreuungsbedarf genauer mit ihnen abstimmen. Dann können Sie entweder den Wunsch nach einem Ihnen aus der Fortbildung bekannten Betreuer äußern, oder die Koordinierungsstelle vermittelt Ihnen einen geeigneten Berater aus dem Expertenpool.

Diese erfahrenen Fachleute stehen Ihnen dann handlungsorientiert als Berater auf Zeit bei klar definierten "kritischen Punkten" zur Verfügung. Mit Rat und Tat leisten sie Ihnen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immer wieder gezielt Unterstützung und stehen Ihnen an bis zu acht Beratungstagen je Projekt vor Ort zur Seite.

Ziel der Projektbetreuung ist es, die beruflichen Kenntnisse, Fähigkeiten und Qualifikationen der verantwortlichen Mitarbeiter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projekten zu erweitern und so zu entwickeln, daß sie in ihrem beruflichen Handlungsfeld wirksam und professionell zur Bekämpfung von Langzeitarbeitslosigkeit und deren Folgen beitragen können.

Diese Projektbetreuung ist ein integrierter Bestandteil der Leistunge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ie ergänzt die Fachtagungen und die Fortbildungsreihen in sehr konkreter und anschaulicher Form und rundet sie ab. Sie knüpft direkt an die Fortbildungsveranstaltungen an und baut darauf auf. Hier kann gemeinsam mit einem kompetenten Sachverständigen im eigenen Arbeitsalltag Erlerntes einer kritischen "Nagelprobe" unterzogen werden.

**Projektbetreuung und Umsetzungsberatung sind kostenlos**

**Sind Sie interessiert an diesem Leistungsangebot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ann rufen Sie uns an oder schreiben Sie uns!**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 V.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Telefon: 030-449 69 74, Fax: 030-449 69 76**

## **Das Leistungsangebot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m Überblick:**

- Fortbildungsreihen** mit integrierten Praktika in erfahren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Das Fortbildungsangebot ist nach einem Modulsystem aufgebaut. Diese Bausteine können bedarfsgerecht zu Seminaren gebündelt und auch einzeln gebucht werden;
- Fachveranstaltungen mit Erfahrungsaustausch** auf nationaler und auf europäischer Ebene;
- Projektbetreuung und Umsetzungsberatung** vor Ort;
- Vermittlung von Praktika**, Förderung von Kontakten und Projektpartnerschaften.

Projektbetreuung und Vermittlung von Praktika sind **kostenlos**. Für die Seminare und anderen Veranstaltungen werden **Teilnehmergebühren** erhoben. **Einzelheiten erfragen** Sie bitte in d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

**Wir informieren Sie gern!  
Schreiben Sie uns, rufen Sie an oder kommen  
Sie ganz einfach in unser Büro.**

**Herausgeber:**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 V.

**Verantwortlich:** Ellen-Ruth Schneider

**Redaktion:** Iris Lusch

**Druck** auf Recyclingpapier in der KOPIERFABRIK

**Berlin 1995**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V.**  
**Koordinierungsstelle Ost – West**  
**Schönhauser Allee 185**  
**10119 Berlin**  
**Telefon: (030) 449 69 74**  
**Telefax: (030) 449 69 76**



문서 번호 43

직업교육 연례보고서 - 1995 년 [발췌]

1995 년 6 월

담당자 / 기관: 연방 교육·학술·연구·기술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1995 년도 직업교육 연례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의 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3/94 년도 직업교육훈련 지원률이 17,5 퍼센트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 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 명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청소년들에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다. (문서 내 개관 1. 참조) 지원자의 총 수는 171,100 명이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이와는 달리 (총 455,200 명 중 235,200 명에 해당하는) 전체 지원자의 약 52 퍼센트의 지원자만이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1994 년에 신연방주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다음 해에도 충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연방주에서 사업체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직업교육훈련은 직장내 직업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은 고용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Hrsg.). Berufsbildungsbericht 1995. Bad Honnef: K.H. Bock Verlag





---

# **Berufsbildungsbericht 1995**



Grundlage für erweiterte berufliche Entwicklungsmöglichkeiten zu erwerben. Durch eine bessere Verzahnung von Aus- und Weiterbildung sowie den Ausbau der Angebote anerkannter Fortbildung müssen chancenreiche Berufswege eröffnet werden. Hierzu gehört auch, daß die Gleichwertigkeit bei der individuellen Förderung der außerschulischen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hergestellt wird<sup>1)</sup>.

Zur Gleichwertigkeit und Attraktivität gehört schließlich auch, daß der Zugang zu allen Bildungswegen, einschließlich des Hochschulstudiums, nicht nur über die Allgemeinbildung, sondern auch über die berufliche Bildung erreicht werden kann. Die Bundesregierung wird auf eine länderübergreifend anerkannte einheitliche Regelung zum Hochschulzugang für qualifizierte Absolventen der Berufsbildung hinwirken<sup>2)</sup>.

Die Weiter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Zusammenarbeit und die Dynamik des europäischen Binnenmarktes erfordern es, den Ausbau des Fremdsprachenlernens in der beruflichen Bildung, die Intensivierung des grenzübergreifenden Berufsbildungsaustausches im Rahmen von europäischen und bilateralen Austauschprogrammen sowie Schritte zur besseren Integration von Berufsbildungsaufenthalten im Ausland in die berufliche Aus- und Weiterbildung weiter zu fördern<sup>3)</sup>.

Besondere Anstrengungen in der Berufsbildungspolitik der Bundesregierung richten sich darauf, auch in den neuen Ländern ein ausreichendes Ausbildungsplatzangebot zu schaffen und zu sichern. Das ist wie in den Jahren zuvor auch 1994 gelungen: Grundlage hierfür war ein Anstie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 um rund 7% und ein erneut hohes staatliches Engagement zur Sicherung eines ausreichenden Ausbildungsplatzangebots. Neben den Länderprogrammen zur Mobilisierung betrieblicher Ausbildung sind 1994 14000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mit einer Gemeinschaftsinitiative des Bundes, der neuen Länder und Berlins, an deren Finanzierung auch der Europäische Sozialfonds beteiligt ist, bereitgestellt worden. Damit konnte wie in den Vorjahren allen Jugendlichen in den neuen Ländern, die dies wünschten, eine berufliche Ausbildung angeboten werden. Allerdings ist es nicht gelungen, den Prozeß der letzten Jahre hin zu einer von der Wirtschaft selbst verantworteten und selbstfinanzierten Berufsausbildung beschleunigt fortzusetzen. Die Bundesregierung erwartet, daß die Wirtschaft in den neuen Ländern angesichts verbesserter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erspektiven 1995 ihre Verantwortung für ein ausreichendes betriebliches Ausbildungsplatzangebot voll wahrnimmt.

Die Bundesregierung beobachtet mit Sorge, daß in den alten Ländern das Ausbildungsplatzangebot der Betriebe, Praxen und Verwaltungen weiter zurückgeht. Eine Fortsetzung dieses Trends schadet nicht nur der Attraktivität des dualen Systems, sondern wird mittelfristig auch zu erheblichem Fachkräftemangel und zu Leistungseinbußen in der Wirtschaft führen. Die Planung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darf nicht an konjunkturellen Entwicklungen sowie kurzfristigen Kostenüberlegungen und Personalplanungen orientiert werden, sondern muß auch längerfristigen Entwicklungsperspektiven und Unternehmensstrategien einbeziehen.

Die von der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erstellten Projektionen über den längerfristigen Qualifikationsbedarf des Beschäftigungssystems signalisieren mittel- bis langfristig einen erheblichen Mangel an Fachkräften. Um auch künftig rund zwei Drittel

<sup>1)</sup> Vgl. Kapitel 3.2.2

<sup>2)</sup> Vgl. Kapitel 3.2.2

<sup>3)</sup> Vgl. Kapitel 3.2.1

aller Jugendlichen den Einstieg in das Berufsleben über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zu ermöglichen, ist ein entsprechendes Ausbildungsplatzangebot Voraussetzung. Die Spitzenorganisationen der deutschen Wirtschaft setzen sich nachhaltig für eine Trendumkehr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ein. Die Unternehmen bleiben aufgefordert, auch im eigenen Interesse allen Ausbildungsplatzbewerbern einen qualifizierten Ausbildungsplatz anzubieten. Dies gilt in gleicher Weise für die öffentlichen Arbeitgeber.

## 1. Ausbildungsstellensituation 1994

1994 sind in Deutschland rund 567800 neue Ausbildungsverträge abgeschlossen worden. Damit wurde das Vorjahresergebnis von 570100 neuen Ausbildungsverhältnissen nur leicht unterschritten (-0,4%).

Nach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tieg die Anzahl der zum 30. September 1994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 gegenüber 1993 um 6,8% auf rund 19000 an, während die Zahl der noch unbesetzten Ausbildungsplätze zum gleichen Zeitpunkt um 36,8% auf 54200 Stellen zurückgegangen ist.

Rechnerisch war die Ausbildungsbilanz in Deutschland 1994 mit 622000 angebotenen Ausbildungsplätzen und 586800 Nachfragern mehr als ausgeglichen. Allerdings hat die Relation von Angebot und Nachfrage infolge deutlicher Angebotsrückgänge erneut abgenommen, von 119 im Jahre 1992 über 112 im Jahre 1993 auf rund 106 angebotene Plätze pro 100 Nachfrager im Jahr 1994 (vgl. **Übersicht 1**, Seite 3).

Regional ist die Entwicklung sehr unterschiedlich verlaufen. Gemessen an der Zahl der Nachfrager ist der Anteil der Jugendlichen, die bis zum 30. September 1994 nicht in eine Berufsausbildung vermittelt werden konnten, in den neuen Ländern, unter anderem auf Grund der Gemeinschaftsinitiativen, deutlich geringer als in den alten Ländern.

### 1.1 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Trotz eines erheblichen Bewerberanstiegs (+17,5 %) sind im Vermittlungsjahr 1993/94 die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bis auf wenige Ausnahmen vermittelt worden. Lediglich rund 1500 Bewerber wurden zum 30. September 1994 i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ls noch nicht vermittelt ausgewiesen. Das sind knapp 1% der insgesamt 171100 Jugendlichen, die in den neuen Ländern als Bewerber gezählt wurden. Im Vorjahr lag die Unvermittelten-Quote noch bei 2%. Dies konnte allerdings nur durch Einsatz erheblicher staatlicher Mittel erreicht werden.

Nach der Verbleib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lag 1994 der Anteil der Bewerber aus den neuen Ländern, die einen Ausbildungsplatz erhalten haben, trotz des erheblichen Bewerberanstiegs etwa auf Vorjahresniveau. Sowohl 1993 als auch 1994 sind gut 70% der Bewerber in einen betrieblichen oder außer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 eingemündet.

In den alten Ländern sind dagegen mit knapp 52% deutlich weniger Bewerber (235200 von insgesamt 455200 Bewerber) in eine Berufsausbildungsstelle eingemündet. Hier haben an-

Übersicht 1: Angebot und Nachfrage 1976 bis 1994

	Bilanz von Angebot und Nachfrage im dualen System (ab 1992 incl. neue Länder)										
	Neue Aus- bildungs- verträge	Offene Plätze	Noch nicht Vermittelte	Angebot	Nachfrage	Angebots- Nachfrage- Relation	Entwicklung zum Vorjahr			Nachfrage	
							Überhang	Verträge	Angebot		
1976	495 800	18 100	27 700	513 900	523 500	98,2	-9 600				
1977	558 400	25 500	27 000	583 900	585 400	99,7	-1 500	12,6	13,6	11,8	
1978	601 700	22 300	23 800	624 000	625 500	99,8	-1 500	7,8	6,9	6,9	
1979	640 300	36 900	19 700	677 200	660 000	102,6	17 200	6,4	8,5	5,5	
1980	650 000	44 600	17 300	694 600	667 300	104,1	27 300	1,5	2,6	1,1	
1981	605 636	37 348	22 140	642 984	627 776	102,4	15 208	-6,8	-7,4	-5,9	
1982	630 990	19 995	34 180	650 985	665 170	97,9	-14 185	4,2	1,2	6,0	
1983	676 734	19 641	47 408	696 375	724 142	96,2	-27 767	7,2	7,0	8,9	
1984	705 652	21 134	58 462	726 786	764 078	95,1	-37 292	4,3	4,4	5,5	
1985	697 089	22 021	58 905	719 110	755 994	95,1	-36 884	-1,2	-1,1	-1,1	
1986	684 710	31 170	46 270	715 880	730 980	97,9	-15 100	-1,8	-0,4	-3,3	
1987	645 746	44 541	33 880	690 287	679 626	101,6	10 661	-5,7	-3,6	-7,0	
1988	604 002	61 962	24 791	665 964	628 793	105,9	37 171	-6,5	-3,5	-7,5	
1989	583 736	84 913	18 278	668 649	602 014	111,1	66 635	-3,4	0,4	-4,3	
1990	545 562	113 873	13 969	659 435	559 531	117,9	99 904	-6,5	-1,4	-7,1	
1991	539 466	128 534	11 205	668 000	550 671	121,3	117 329	-1,1	1,3	-1,6	
Insg. 1992 <sup>1)</sup>	595 215	126 610	12 975	721 825	608 190	118,7	113 635				
Insg. 1993	570 120	85 737	17 759	655 857	587 879	111,6	67 978	-4,2	-9,1	-3,3	
Insg. 1994	567 840	54 152	18 970	621 992	586 810	106,0	35 182	-0,4	-5,2	-0,2	
Alte Länder: 1992	499 985	123 378	11 756	623 363	511 741	121,8	111 622	-7,3	-6,7	-7,1	
Alte Länder: 1993	471 169	83 655	14 841	554 824	486 010	114,2	68 814	-5,8	-11,0	-5,0	
Alte Länder: 1994	450 210	52 767	17 456	502 977	467 666	107,6	35 311	-4,4	-9,3	-3,8	
Neue Länder: 1992 <sup>1)</sup>	95 230	3 232	1 219	98 462	96 449	102,1	2 013				
Neue Länder: 1993	98 951	2 082	2 918	101 033	101 869	99,2	-836	3,9	2,6	5,6	
Neue Länder: 1994	117 630	1 385	1 514	119 015	119 144	99,9	-129	18,9	17,8	17,0	

<sup>1)</sup> 1991 lagen keine verfügbaren Daten für die neuen Länder vor

Quelle: Berufsbildungsberichte bis 1994, Erhebung zum 30. September 1994, Berufsberatungstatistik September 1994

## 1.1 Situation in den neuen Ländern

teilig deutlich mehr Bewerber als in den neuen Ländern einen schulischen Qualifizierungsweg eingeschlagen, nahmen eine Arbeit auf oder haben eine sonstige Tätigkeit gewählt.

Bei der Beurteilung dieser Ergebnisse sind die Besonderheite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 berücksichtigen, die neben Ratsuchenden, welche ausschließlich ein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beginnen wollen, auch solche Ratsuchende als „Bewerber für Berufsausbildungsstellen“ zählt, die neben einer betrieblichen Ausbildung auch andere Alternativen in Erwägung ziehen. Auch in Phasen eines entspannteren Ausbildungsstellenmarktes hat sich in den alten Ländern stets eine größere Anzahl von Bewerbern für Alternativen zur Ausbildung entschieden. Alternative Übergänge zur Berufsausbildung können deshalb weder in den neuen noch in den alten Ländern generell mit „Verdrängung“ gleichgesetzt werden.

Die Zahl der in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ausgewiesenen Bewerber (171100) in den neuen Ländern liegt deshalb weit über der gesetzlich definierten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Ausbildungsbeginner (117630) und der Anzahl noch nicht vermittelter Bewerber (1514) sowie der Anzahl von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die in den alten Ländern eine Berufsausbildung begonnen haben (13800<sup>1)</sup>), erreicht diese Nachfrage aus den neuen Ländern rund 133000 Jugendliche (ohne die schätzungsweise 3500 Pendler aus dem Ostteil Berlins, die im Westteil eine Berufsausbildung begonnen haben).

### Neue Ausbildungsverträge

1994 sind in den neuen Ländern knapp 118000 neue Ausbildungsverträge abgeschlossen worden (vgl. **Übersicht 2**). Damit ist das Vorjahresergebnis um rund 19% übertroffen worden. Dieses positive Ergebnis ist in den neuen Ländern

<sup>1)</sup> Vgl. Teil II, Kapitel 1.1.4

jedoch weniger auf den Zuwachs an 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7,1%) als vielmehr auf den Anstieg außerbetrieblicher Plätze (+94,6 %) zurückzuführen. Lag der Ausbildungsanteil außerbetrieblicher Plätze 1993 noch bei 13,5%, so erreichte er 1994 22,1%. Entsprechend ist der Anteil betrieblicher Ausbildungsplätze von 86,5% in 1993 auf 77,9% 1994 zurückgegangen. Die positive Vertrags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setzt sich zusammen aus einem Anstie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sverträge von über 6000 und einem etwa doppelt so großen Aufwuchs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von rund 12600 Verträgen.

In den neuen Ländern haben die neuen Ausbildungsverträge vor allem im Ausbildungsbereich von Industrie und Handel zugenommen. Dabei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se Entwicklung auch durch Neuverträge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bestimmt ist. Beträchtlich zugenommen haben die Neuverträge auch im Handwerk, das damit erneut sein Vorjahresergebnis deutlich übertreffen konnte. Erfreulich ist ferner die Entwicklung bei den Freien Berufen, die den Rückgang der Ausbildungsverträge des Vorjahres nahezu wieder ausgleichen konnten.

Zurückgegangen sind die Vertragsabschlüsse in der Landwirtschaft. Bei der Entwicklung im öffentlichen Dienst spielt wie im Westen der Privatisierungsprozeß von Bahn und Post eine Rolle. Zu berücksichtigen ist, daß ein Teil der neuen Ausbildungsverhältnisse in diesem Bereich nicht mehr durch den öffentlichen Dienst gemeldet werden. Insoweit liegen hier statistische Gründe für den Rückgang vor. Gegenüber dem Vorjahr sind bei Bahn und Post rund 500 Stellen im öffentlichen Dienst weniger gemeldet worden. Angesichts eines Rückgangs von insgesamt knapp 300 Stellen im öffentlichen Dienst, haben die übrigen Stell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gegenüber dem Vorjahr sogar noch etwas zulegen können.

Gegenüber dem Vorjahr sind abgesehen von dem noch sehr kleinen Ausbildungsberuf des Hauswirtschafter/der Hauswirtschafterin im ländlichen Bereich vor allem die Aus-

## Übersicht 2: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1992 bis 1994 in den neuen Ländern

Ausbildungsbereich	Anzahl 1992	Anzahl 1993	Vorjahresvergleich in Prozent	Anzahl 1994	Vorjahresvergleich in Prozent
Industrie und Handel	49 188	45 182	-8,1	55 321	22,4
Handwerk	30 128	39 665	31,7	47 635	20,1
Öffentlicher Dienst <sup>1)</sup> 2)	4 460	4 551	2,0	4 264	-6,3
Landwirtschaft	2 312	2 554	10,5	2 433	-4,7
Freie Berufe <sup>2)</sup>	6 833	5 726	-16,2	6 600	15,3
Hauswirtschaft	2 289	1 273	-14,4	1 369	7,5
Seeschifffahrt	20	0	-	8	-
<b>Insgesamt</b>	<b>95 230</b>	<b>98 951</b>	<b>3,9</b>	<b>117 630</b>	<b>18,9</b>
Davon:					
Außerbetrieblich	20 244	13 359	-34,1	25 981	94,6
Betrieblich	74 986	85 601	14,2	91 649	7,1

<sup>1)</sup> Ohne Laufbahnausbildungen im Beamtenverhältnis

<sup>2)</sup> Ohne jene neuen Ausbildungsverträge, für die andere Stellen (Kammern) zuständig sind.

Quelle: Erhebung zum 30. September 1992 bis 1994,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undesanstalt für Arbeit;

Übersicht 3: Anteilsstruktur betrieblicher und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splätze in den neuen Ländern

Bundesland Arbeitsamtsbezirk	Ausbildungsplätze Ende September 1994							Anteilsstruktur der Plätze in Prozent				
	Neue Aus- bildungs- verträge	Darunter: AFG § 40 c 2	GIOst 1993	GIOst 1994	Außerbe- triebliche Plätze ins- gesamt	Betriebliche Plätze	AFG § 40 c 2	GIOst 1993	GIOst 1994	Außerbetrieb- liche Plätze		
<b>Mecklenburg-Vorpommern</b>	<b>17 502</b>	<b>2 227</b>	<b>1 153</b>	<b>2 922</b>	<b>6 302</b>	<b>64,0</b>	<b>12,7</b>	<b>6,6</b>	<b>16,7</b>	<b>36,0</b>		
Neubrandenburg	4 451	581	555	1 037	2 173	51,2	13,1	12,5	23,3	48,8		
Rostock	5 475	591	289	659	1 539	71,9	10,8	5,3	12,0	28,1		
Schwerin	4 807	571	272	578	1 421	70,4	11,9	5,7	12,0	29,6		
Stralsund	2 769	484	37	648	1 169	57,8	17,5	1,3	23,4	42,2		
<b>Brandenburg</b>	<b>18 901</b>	<b>1 317</b>	<b>890</b>	<b>2 369</b>	<b>4 576</b>	<b>75,8</b>	<b>7,0</b>	<b>4,7</b>	<b>12,5</b>	<b>24,2</b>		
Cottbus	4 909	335	195	562	1 092	77,8	6,8	4,0	11,4	22,2		
Eberswalde	2 360	226	153	420	799	66,1	9,6	6,5	17,8	33,9		
Frankfurt (Oder)	3 491	327	250	570	1 147	67,1	9,4	7,2	16,3	32,9		
Neuruppin	3 239	254	99	406	759	76,6	7,8	3,1	12,5	23,4		
Potsdam	4 902	175	193	411	779	84,1	3,6	3,9	8,4	15,9		
<b>Sachsen-Anhalt</b>	<b>20 722</b>	<b>1 845</b>	<b>402</b>	<b>1 645</b>	<b>3 892</b>	<b>81,2</b>	<b>8,9</b>	<b>1,9</b>	<b>7,9</b>	<b>18,8</b>		
Dessau	1 957	201	98	256	555	71,6	10,3	5,0	13,1	28,4		
Halberstadt	2 282	218	72	233	523	77,1	9,6	3,2	10,2	22,9		
Halle	4 233	251	128	170	549	87,0	5,9	3,0	4,0	13,0		
Magdeburg	5 027	441	0	293	734	85,4	8,8	0,0	5,8	14,6		
Merseburg	2 654	187	64	275	526	80,2	7,0	2,4	10,4	19,8		
Sangerhausen	1 725	290	7	270	567	67,1	16,8	0,4	15,7	32,9		
Stendal	1 859	149	17	88	254	86,3	8,0	0,9	4,7	13,7		
Wittenberg	985	108	16	60	184	81,3	11,0	1,6	6,1	18,7		
<b>Sachsen</b>	<b>35 515</b>	<b>1 511</b>	<b>1 191</b>	<b>3 672</b>	<b>6 374</b>	<b>82,1</b>	<b>4,3</b>	<b>3,4</b>	<b>10,3</b>	<b>17,9</b>		
Annaberg	2 843	91	188	475	754	73,5	3,2	6,6	16,7	26,5		
Bautzen	4 796	260	196	990	1 446	69,8	5,4	4,1	20,6	30,2		
Chemnitz	4 524	130	176	272	578	87,2	2,9	3,9	6,0	12,8		
Dresden	5 346	153	56	271	480	91,0	2,9	1,0	5,1	9,0		
Leipzig	7 215	210	152	504	866	88,0	2,9	2,1	7,0	12,0		
Oschatz	1 052	89	79	175	343	67,4	8,5	7,5	16,6	32,6		
Pirna	2 894	104	58	476	638	78,0	3,6	2,0	16,4	22,0		
Plauen	2 070	148	96	120	364	82,4	7,1	4,6	5,8	17,6		
Riesa	1 649	82	10	175	267	83,8	5,0	0,6	10,6	16,2		
Zwickau	3 126	244	180	214	638	79,6	7,8	5,8	6,8	20,4		
<b>Thüringen</b>	<b>19 447</b>	<b>1 391</b>	<b>495</b>	<b>1 497</b>	<b>3 383</b>	<b>82,6</b>	<b>7,2</b>	<b>2,5</b>	<b>7,7</b>	<b>17,4</b>		
Altenburg	1 055	76	38	108	222	79,0	7,2	3,6	10,2	21,0		
Erfurt	4 377	336	91	215	642	85,3	7,7	2,1	4,9	14,7		
Gera	2 739	178	33	211	422	84,6	6,5	1,2	7,7	15,4		
Gotha	2 688	226	85	266	577	78,5	8,4	3,2	9,9	21,5		
Jena	2 636	163	58	183	404	84,7	6,2	2,2	6,9	15,3		
Nordhausen	2 353	216	111	273	600	74,5	9,2	4,7	11,6	25,5		
Suhl	3 599	196	79	241	516	85,7	5,4	2,2	6,7	14,3		
<b>Berlin (Ost)</b>	<b>5 543</b>	<b>428</b>	<b>361</b>	<b>665</b>	<b>1 454</b>	<b>73,8</b>	<b>7,7</b>	<b>6,5</b>	<b>12,0</b>	<b>26,2</b>		
<b>Neue Länder</b>	<b>117 630</b>	<b>8 719</b>	<b>4 492</b>	<b>12 770</b>	<b>25 981</b>	<b>77,9</b>	<b>7,4</b>	<b>3,8</b>	<b>10,9</b>	<b>22,1</b>		

Quell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undesanstalt für Arbeit

## 1.2 Situation in den alten Ländern

bildungsverträge für den Beruf des Bauzeichners/der Bauzeichnerin (+ 82%), des Bürokaufmann/der Bürokauffrau (+71%), des Kaufmann/der Kauffrau für Bürokommunikation (+54%) und die Verträge für Berufe im Hotel- und Gaststättengewerbe (+53%) überdurchschnittlich erhöht worden. Überdurchschnittliche Vertragsrückgänge verzeichnen der Beruf des Industriemechanikers/der Industriemechanikerin (-33%) sowie die Technikerberufe im öffentlichen Dienst (-15%).

###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Von den knapp 118000 neuen Ausbildungsverträgen zum 30. September 1994 entfallen rund 26000 oder 22,1% auf außerbetriebliche Plätze; das sind rund 8700 Plätze nach §40c Abs. 2 AFG, 4500 Plätze der Gemeinschaftsinitiative 1993 und 12 800 nach der Gemeinschaftsinitiative 1994<sup>1)</sup>.

Überdurchschnittlich hoch liegt der Anteil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sstellen in Mecklenburg-Vorpommern mit 36,0% und im Ostteil Berlins mit 26,2% sowie in Brandenburg mit 24,2%. Es folgen Sachsen-Anhalt mit 18,8%, Sachsen mit 17,9% und Thüringen mit 17,4%. Regional liegen die Anteilswerte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noch weiter auseinander: In Mecklenburg-Vorpommern erreicht der Arbeitsamtsbezirk Neubrandenburg mit 48,8% den höchsten Anteil an außerbetrieblichen Ausbildungsstellen, Dresden mit 9,0% den niedrigsten Wert aller Arbeitsamtsbezirke in den neuen Ländern (vgl. **Übersicht 3**, Seite 5).

Insgesamt (d.h. über alle Ausbildungsjahre) befanden sich im Dezember 1994 rund 16600 Jugendliche in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nach §40c Abs. 2 AFG, rund 16800 nach §40c Abs. 4 AFG/DDR, rund 7500 in Maßnahmen der GIOst 1993 und etwa 13900 der GIOst 1994 (einschließlich Berlin West). Zusammengekommen sind dies rund 55000 Jugendliche in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Damit hat die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eine Größenordnung erreicht, die neben finanziellen auch ordnungspolitische und durch die eher betriebsferne Ausbildung mittelfristig auch arbeitsmarktpolitische Fragen aufwirft.

### *Staatliche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Nach dem Volumen an betrieblicher Förderung durch die Länderprogramme<sup>2)</sup> ist davon auszugehen, daß 1994 rund 45000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gefördert worden sind. Einschließlich der 26000 außerbetrieblichen Plätzen wurden 1994 insgesamt über 70000 Ausbildungsplätze staatlich gefördert. Bei einer Zahl von rund 118000 neuen Ausbildungsverträgen hat der Anteil staatlicher Förderung von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60% erreicht.

Vor diesem Hintergrund ist eine Entwicklung zugunsten einer von der Wirtschaft selbst verantworteten 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noch nicht zu erkennen. 1994 ist eher eine gegenläufige Entwicklung eingetreten. Insoweit sind sowohl aus förderungs- als auch aus ordnungspolitischer Sicht Fehlentwicklungen festzustellen, denen entschieden entgegengesteuert werden muß.

<sup>1)</sup> Bis zum 31. Dezember 1994 ist die Zahl der Teilnehmer in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auf rund 13900 gestiegen

<sup>2)</sup> Vgl. Tabelle 3/3 im Anhang

## 1.2 Situation in den alten Ländern

Der Ausbildungsstellenmarkt in den alten Ländern war erneut von einer rückläufigen Zahl neuer Ausbildungsverträge bestimmt, wengleich in einem geringeren Maße als in den beiden zurückliegenden Jahren (vgl. **Übersicht 4**, Seite 7). Angesichts wieder leicht zunehmender Absolventenjahrgänge aus den Schulen sowie einer deutlich verbesserten wirtschaftlichen Situation ist diese Entwicklung weder mit demografischen noch mit konjunkturellen Faktoren zu erklären.

### *Neue Ausbildungsverträge*

Gemessen an der absoluten Zahl der neuen Ausbildungsverträge konzentriert sich – wie bereits im Vorjahr – der Rückgang der Neuverträge auf den Ausbildungsbereich von Industrie und Handel. Damit hat sich in den alten Ländern in großen Teilen der Wirtschaft eine seit mehreren Jahren zu beobachtende Tendenz – wenn auch abgeschwächt – fortgesetzt.

Bei der Entwicklung im öffentlichen Dienst spielt der Privatisierungsprozeß von Bundespost und Bundesbahn/Reichsbahn eine ausschlaggebende Rolle. Mit der Eintragung der Deutschen Bahn AG ins Handelsregister sind für die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1994 dieses Unternehmens bereits die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zuständige Stellen geworden. Dies gilt ab 1995 auch für die Postbereiche. Gegenüber dem Vorjahr sind allein in diesen beiden ehemaligen zentralen Ausbildungsbereich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rund 3900 neue Ausbildungsverträge weniger gemeldet worden. Aber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Sonderentwicklung bei Bahn und Post ist der Rückgang der neuen Ausbildungsverträge in Beruf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mit rund -7% in den Bundesbehörden (ohne Bahn und Post) und -16% in den übrigen Dienststell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überdurchschnittlich ausgefallen. Dies ist mit der im öffentlichen Dienst vorgesehenen Personaleinsparung nicht erklärbar. Allerdings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Ausbildung im Bereich der Bundesverwaltung in den Berufen, die bei den Kammern gemeldet werden, die Zahl der Ausbildungsverhältnisse übersteigt, für die der öffentliche Dienst zuständige und meldende Stelle ist.

Eine positive Entwicklung nahmen die Vertragszahlen im Handwerk und im Ausbildungsbereich der Hauswirtschaft. Sie hat jedoch nicht ausgereicht, um den Rückgang der übrigen Ausbildungsbereiche in den alten Ländern auszugleichen. Gegenüber dem Vorjahr sind vor allem die Ausbildungsverträge für die Stufenausbildung in der Bauwirtschaft (16%), für den Beruf des Hauswirtschafter/der Hauswirtschafterin im städtischen Bereich (14%), des Zahnarzthelfers/der Zahnarzthelferin (14%), des Maler und Lackierers/der Malerin und Lackiererin (10%) sowie des Zentralheizungs- und Lüftungsbauers/der Zentralheizungs- und Lüftungsbauerin (10%) überdurchschnittlich erhöht worden. Überdurchschnittliche Vertragsrückgänge verzeichnen der Beruf des Kaufmanns/der Kauffrau für Bürokommunikation (-31%)<sup>1)</sup>, des Werkzeugmachers/der Werkzeugmacherin Stanz- und Umformtechnik (-21%) sowie des Technischen Zeichners/der Technischen Zeichnerin (-21%).

<sup>1)</sup> Dieser Beruf hat im Vorjahr in Folge der Neuordnung noch um 56% zugenommen. Wahrscheinlich liegen hier Probleme der statistischen Erfassung vor.

## Ausbildungsplatzbilanz

Nach der Berufsberatungsstatistik ist das Vermittlungsjahr 1994 in den alten Ländern mit knapp 52 800 noch offenen Stellen und rund 17 500 noch nicht vermittelten Bewerbern zu Ende gegangen. Dabei ging die Zahl der noch nicht besetzten Ausbildungsstellen um 36,9% zurück, während die Anzahl noch nicht vermittelter Bewerber um 17,6% anstieg. Rein rechnerisch standen damit immer noch deutlich mehr Stellen zur Verfügung als nachgefragt wurden.

Das Angebots-Nachfrage-Verhältnis ist in den alten Ländern allerdings von durchschnittlich 122 Stellen pro 100 Nachfrager im Jahre 1992 auf 114 im Jahre 1993 gesunken, 1994 erfolgte ein weiterer Rückgang dieser Maßgröße auf 107 Stellen pro 100 Ausbildungsnachfragern (vgl. **Übersicht 1**, Seite 3).

21 Arbeitsamtsbezirke wiesen eine höhere Zahl noch nicht vermittelter Bewerber auf als noch unbesetzte Plätze vorhanden waren. Regionale Schwerpunkte enger Ausbildungsmärkte sind Nordrhein-Westfalen, und hier vor allem das Ruhrgebiet, Bremen mit Bremerhaven, aber auch einige Regionen in Niedersachsen und in Hessen sowie der Westteil Berlins<sup>1)</sup>.

Hiermit hat sich eine Entwicklung fortgesetzt, die nach ersten Meldung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ngesichts weiter ansteigender Bewerberzahlen und rückläufiger Stellenangebote auch für das neue Vermittlungsjahr 1994/95 bestimmend sein könnte. Für das Jahr 1995 besteht die Gefahr einer nicht mehr ausgeglichenen Lehrstellenbilanz, zumindest in deutlich mehr Regionen als 1994. Dies macht verstärkte Anstrengungen aller Beteiligten erforderlich. Notwendig ist eine Trendumkehr. Die Bundesregierung begrüßt deshalb nachdrücklich die „Aktion Plus“ der deutschen Wirtschaftsverbände für zusätzliche Ausbildungsplätze<sup>2)</sup>.

<sup>1)</sup> Vgl. Teil II, Kapitel 1.2

<sup>2)</sup> Pressemeldung „Wirtschaftsverbände: Mehr Ausbildungsplätze '95“; 9. Februar 1995, Köln/Bonn

## Kosten und Nutzen von Ausbildung

Unter dem Eindruck der Rezession reduzierte eine größere Zahl von Betrieben in den alten Ländern ihr Ausbildungsplatzangebot. Dabei spielen Kostengesichtspunkte der Ausbildung nach eigenen Angaben der Unternehmen<sup>1)</sup> eine herausragende Rolle. In dieser Situation kann die Kosten- und Nutzen-Untersuch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sup>2)</sup> zu einer rationaleren Kosten-Nutzen-Einschätzung beitragen. Sie ist in der Öffentlichkeit verkürzt und im Ergebnis verzerrt aufgenommen worden: Die Unternehmen wendeten hohe Kosten ohne entsprechende Erträge für die Ausbildung auf. Das wesentliche Ergebnis der Untersuch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ist in Wahrheit, daß di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für die Betriebe eine lohnende Investition ist, die sich bei einer betriebswirtschaftlichen Kosten-Nutzen-Betrachtung, die neben den kurzfristigen auch langfristige Nutzenaspekte einbezieht, rechnet. Inzwischen liegt eine aktuelle Studie der AEG vor, die zu vergleichbaren Ergebnissen kommt.<sup>3)</sup>

Bei betriebswirtschaftlicher Kostenrechnung müssen von den Nettokosten, die den Betrieben während der Ausbild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rträge durch die Auszubildenden entstehen, die zu erwartenden „Opportunitätsenerträge“ pro Auszubildenden abgezogen werden. Das sind die in Ausbildungsbetrieben nach der Ausbildung zu erwartenden längerfristigen Einsparungen durch Vermeidung jener Kosten, die in Betrieben anfallen, wenn der Fachkräftebedarf statt durch Ausbildung am externen Arbeitsmarkt gedeckt wird. Dazu ist folgendes zu zählen:

<sup>1)</sup> Vgl. „Qualifizierungs- und Personalgewinnungsverhalten von Unternehmen“, Ergebnisse von vier Betriebsbefragungen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onn 1994, vgl. hierzu auch Teil II, Kapitel 1.4.1

<sup>2)</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4, Teil II, Kapitel 3.7.1

<sup>3)</sup> Vgl. Cramer, G./Müller, K.: „Nutzen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Beiträge des Institutes der deutschen Wirtschaft zur Gesellschafts- und Bildungspolitik, Nr. 19, Köln 1994, und Kuratorium der deutschen Wirtschaft für Berufsbildung (Hrsg.), Berufsausbildung auf dem Prüfstand, Bonn 1994.

## Übersicht 4: Neu abgeschlossene Ausbildungsverträge 1992 bis 1994 in den alten Ländern

Ausbildungsbereich:	Anzahl 1992	Vorjahres- vergleich in Prozent	Anzahl 1993	Vorjahres- vergleich in Prozent	Anzahl 1994	Vorjahres- vergleich in Prozent
Industrie und Handel	246 739	-11,4	220 804	-10,5	202 977	-8,1
Handwerk	162 363	-4,5	164 274	1,2	167 472	1,9
Öffentlicher Dienst <sup>1)</sup> 2)	20 942	-4,3	20 125	-3,9	14 183	-29,5
Landwirtschaft	10 428	-12,4	9 846	-5,6	9 831	-0,2
Freie Berufe <sup>3)</sup>	56 269	4,4	53 212	-5,4	52 457	-1,4
Hauswirtschaft	3 088	-4,3	2 762	-10,6	3 166	14,6
Seeschifffahrt	156	4,0	146	-6,4	124	-15,1
<b>Insgesamt</b>	<b>499 985</b>	<b>-7,3</b>	<b>471 169</b>	<b>-5,8</b>	<b>450 210</b>	<b>-4,4</b>
Darunter Ost-West-Pendler <sup>3)</sup>	19 400		16 500		13 800	

<sup>1)</sup> Ohne Laufbahnausbildungen im Beamtenverhältnis

<sup>2)</sup> Ohne jene Ausbildungsverträge, für die andere Stellen (Kammern) zuständig sind.

<sup>3)</sup> Ohne Ost-West-Mobilität in Berlin

Quelle: Erhebung zum 30. September 1992 bis 1994,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1.2 Situation in den alten Ländern

- Bei hochqualifizierten Fachkräfteberufen entstehen wegen einer mindestens halbjährigen Einarbeitungsphase, in der ein neuer Mitarbeiter nur 50% der Leistung einer im Betrieb ausgebildeten Nachwuchskraft erbringt, in der Regel hohe Kosten für Einarbeitung und Anpassungsqualifizierung.
- Ein Betrieb, der qualifizierte Fachkräfte anwerben muß, ist häufig auf „Lockangebote“ angewiesen, die zu Veränderungen der Lohnstruktur und damit zu erhöhten Lohnkosten führen können.
- Bei Einstellung von Fremdkräften besteht stets das Risiko kostenträchtiger Fehlbesetzungen, die bei Einstellung „eigener“ Auszubildender weitgehend entfallen.
- Einem Ausbildungsbetrieb entstehen meist wesentlich geringere Personalbeschaffungskosten<sup>1)</sup>.
- Bei Einstellung zumeist besonders „betriebsverbundener“ Auszubildender fallen niedrigere „Fluktuationskosten“ an.
- Innerbetriebliche Ausbildung ist ein wesentlicher Faktor für das Image eines Betriebes nach innen und nach außen und hat damit nicht zu unterschätzende Bedeutung für den Betriebserfolg.

Die Feststellung der AEG-Studie, daß die Nichtberücksichtigung von „Opportunitätserrträgen“ der betrieblichen Berufsausbildung bei Kostenreduzierungskonzepten zu gravierenden Fehleinschätzungen führt, wodurch den Unternehmen mittel- bis langfristig wesentlich höhere Kosten entstehen können, ist nachdrücklich zu unterstreichen.

Ferner weisen die erheblichen Differenzen zwischen den Nettokosten der Berufsausbildung (Bruttokosten abzüglich der von den Auszubildenden zeitgleich erwirtschafteten Erträge) in kleinen und mittleren Betrieben auf der einen und Großbetrieben auf der anderen Seite darauf hin, daß Kostenreduzierungsmaßnahmen auch in der Gestaltung der Berufsausbildung liegen: Ohne die hohe Qualität der großbetrieblichen Ausbildung zu gefährden, kann eine auch berufspädagogisch erwünschte stärkere Einbeziehung des Lernortes Arbeitsplatz in der betriebswirtschaftlichen Rechnung durchaus auch zu einer Verbesserung der anfallenden Ausbildungserträge und damit zu einer Verminderung der Nettokosten in der Ausbildung führen. Diese Zusammenhänge müssen den Betrieben deutlicher bewußt gemacht werden.

Ausbildung ist nach Auffassung befragter Unternehmen eine der wichtigsten Voraussetzungen innovativer Unternehmensentwicklungen und damit unverzichtbarer Bestandteil der Qualifizierungs- und Personalgewinnungsstrategien der Unternehmen<sup>2)</sup>. Es sind aber deutliche Anzeichen erkennbar, daß die betriebliche Ausbildung stärker als in der Vergangenheit bedarfsorientiert geplant und durchgeführt wird. Gerade unter diesem Gesichtspunkt müßte der Berufsausbildung eher ein wieder wachsender Stellenwert in den Unternehmen zukommen. In jedem Fall ist es kurzfristig, aus Kostengründen und zur kurzfristigen Verbesserung der Ertragslage Investitionen in berufliche Bildung zu unterlassen, die mittelfristig über den wirtschaftlichen Erfolg und die Wettbewerbsfähigkeit eines Unternehmens entscheiden.

### Qualifizierungsbedarf

Die derzeitige Unternehmens- und Organisationsentwicklung wird immer öfter bestimmt durch Begriffe wie „Enthierarchisierung“, „Lean Management“, „Gruppenarbeit“ und „Kontinuierlicher Verbesserungsprozeß“<sup>3)</sup>. Die Entwicklung führt zu einer zunehmend auftragsbezogenen Produktion, die dezentral organisiert ist und daher rasch und flexibel auf Veränderungen reagieren kann.

Der Ausbau der neuen Techniken unterstützt diese Entwicklung. Er ermöglicht es, Produktionsplanung und -steuerung besser zu koordinieren. Auch relativ kleine Betriebseinheiten erhalten somit eigene Dispositionsspielräume. Flexible Fertigungssysteme, Fertigungsinseln und Fertigungszellen werden zum Merkmal dieser Entwicklung. In diese kleinen Einheiten werden Qualitätskontrolle und -optimierung sowie Instandhaltungsarbeiten integriert. Derzeit wird die Produktionsarbeit durch eine Vielzahl neuer Tätigkeiten angereichert. Gestaltungsfreiräume, aber auch ein hohes Maß an Selbststeuerung und Eigenverantwortung der Fachkräfte sind die Folge. Der Mangel an dafür qualifizierten Fachkräften wird zunehmend zum Wachstumsengpaß.

Systemdenken bzw. Einsicht in betriebliche Arbeitsstrukturen und ihre Gestaltbarkeit sind deshalb auch zu einem unverzichtbaren Gegenstand der beruflichen Bildung geworden. In den neuen Ausbildungsordnungen sind diese Qualifizierungsziele bereits weitgehend aufgegriffen worden.

Konsequenterweise verändert sich auch die Berufsausbildung in den Betrieben selbst. Arbeitsbezogenes Lernen gewinnt in der Berufsausbildung generell wieder an Bedeutung. Reale Auftragsarbeiten treten an die Stelle von Übungen und Lehrgangsaufgaben. Dabei sollen betriebswirtschaftliche Kostenkalküle berücksichtigt, betriebsspezifische Arbeitsmaterialien genutzt und nicht zuletzt auch angemessene Erträge erwirtschaftet werden.

Entscheidend für die Neugestaltung des Lernens im Arbeitsprozeß sind jedoch die arbeitsorganisatorischen Veränderungen selbst, die die Qualifikationsanforderungen an das Personal erhöhen und verbreitern. „Lean Production“ ist mit „Small Qualification“ nicht erreichbar<sup>4)</sup>.

Bisherige Erfahrungen und Erkenntnisse zeigen zudem, daß eine arbeitsplatznahe Berufsausbildung sowohl für die Betriebe als auch für die Auszubildenden interessanter und damit attraktiver ist.

### Neue Qualifizierungsfelder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ist nicht nur von nachhaltigen arbeitsorganisatorischen Veränderungen, sondern auch von Entwicklungen geprägt, die zu neuen Tätigkeitsfeldern und neuen Wirtschaftsbereichen geführt haben. Die Palette dieser Wachstumsbereiche reicht von dem Gesundheits- und Pflegebereich über den Fremdenverkehr und Freizeitbereich zu neuen Tätigkeitsfeldern im Umweltschutz und der Sicherheit sowie der neuen Medien. Häufig fehlen in diesen Bereichen noch formalisierte Aus- und Weiterbildungsgänge. Hier besteht ein berufsbildungspolitisches Handlungsfeld, das bislang noch zu wenig Beachtung gefunden hat. Das duale Ausbildungssystem bedarf insoweit der ständigen Weiterentwicklung.

<sup>1)</sup> In der genannten AEG-Studie wird der jahresdurchschnittliche „Opportunitätserrtrag“ bei den vorgenannten Kostenarten je gewerblich-technischen Auszubildenden auf 9600 bis 22700 und je kaufmännischen Auszubildenden auf 9000 bis 23500 DM beziffert.

<sup>2)</sup> Vgl. „Qualifizierungs- und Personalgewinnungsverhalten von Unternehmen“, a.a.O.

<sup>3)</sup> Vgl. Teil II, Kapitel 4.1

<sup>4)</sup> Vgl. Berufsbildungsbericht 1994, Seite 4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hat erste Untersuchungen und Analysen<sup>1)</sup> zu diesen Tätigkeitsfeldern bereits vorgelegt und erste Sondierungsgespräche mit den Sozialpartnern geführt. Es ist davon auszugehen, daß in diesen expansiven Wirtschaftsbereichen eine bedarfsgerechte Entwicklung neuer Aus- bzw. Fortbildungswege auch neue attraktive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schaffen wird.

## 2. Vorausschätzung der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Die künftige Entwicklung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ist sowohl von dem Berufswahlverhalten der Jugendlichen als auch von dem Ausbildungsplatzangebot der Betriebe und Verwaltungen bestimmt. Beide Faktoren des Ausbildungsstellenmarktes beeinflussen sich wechselseitig. Angesichts einer Vielzahl von Qualifizierungsalternativen zur betrieblichen Ausbildung wird die Entwicklung der Ausbildungsplatznachfrage nachhaltig durch die Quantität und Qualität des Ausbildungsplatzangebots mitbestimmt.

Schulabgängerbefragungen belegen, daß das Interesse der Jugendlichen für ein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nach wie vor sehr groß ist<sup>2)</sup>. Unter rein demografischen Aspekten dürfte die Nachfrage in Deutschland 1995 auf etwa 600 000 Jugendliche anwachsen. Angesichts der konjunkturellen Erholung in Ost und West und den damit verbundenen größeren Handlungsspielräumen der Betriebe, Praxen und Verwaltungen für zusätzliche Ausbildungsangebote ist gegebenenfalls sogar mit einer etwas höheren Anzahl an Nachfragern für Berufsausbildung zu rechnen.

### 2.1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in den alten Ländern

Nach den Schulabgängerprognos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sup>3)</sup>, die auf der Kurzzeitprognose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asiert, werden sich die Jahrgangsstärken der Schulabgänger 1995 erneut nur geringfügig erhöhen. Tendenziell wird für Schulabgänger aus dem Sekundarbereich I mit einer leicht ansteigenden Zahl (1994: +1,0%; 1995: +1,6%) zu rechnen sein. Auch die Anzahl der Schulabgänger mit einer Studienberechtigung dürfte nach der Vorausschätzung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wieder leicht zunehmen (1994: +0,5%; 1995: +1,0%). Die für die Ausbildungsplatznachfrage relevanten teilqualifizierenden Formen der beruflichen Schulen (Berufsvorbereitungsjahr, Berufsgrundbildungsjahr und die Berufsfachschulen) werden nach den vorliegenden Prognosen der Kultusministerkonferenz<sup>4)</sup> nur wenig geänderte Absolventenzahlen aufweis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Nachfrageverhaltens der Jugendlichen im Jahr 1994 dürfte sich der demografisch bedingte

leichte Wiederanstieg der Absolventenzahlen stabilisierend auf dem Ausbildungsstellenmarkt auswirken. Die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aus den alten Ländern dürfte deshalb im Vergleich zu 1994 in etwa gleichbleiben, bei einem wieder erhöhten Lehrstellenangebot gegebenenfalls wieder leicht zunehmen.

Insgesamt wird aus den alten Ländern mit einer Nachfrage zwischen 455 000 und 465 000 gerechnet. Unter Berücksichtigung einer demografisch bedingt höheren Nachfrage von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und konstanter Mobilitätsbereitschaft der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kommen schätzungsweise rund 15 000 Jugendliche hinzu, die eine Ausbildung in den alten Ländern beginnen. Insgesamt dürfte die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1995 in den alten Ländern somit zwischen 470 000 und 480 000 liegen (1994: rund 468 000; einschließlich der Ausbildungsverträge von 13 800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sup>1)</sup>.

### 2.2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Für das angelaufene neue Vermittlungsjahr 1994/95 ist in den neuen Ländern mit einer weiteren Steigerung der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zu rechnen.

Angesichts fehlender Prognosen über die Zahl der Schulabsolventen ist eine Nachfrageschätzung vorgenommen worden, die sich auf Angaben der Statistischen Landesämter zu den Schülerzahlen nach Schuljahren in den neuen Ländern stützt. Nach der Schülerstatistik der Statistischen Landesämter zum Schuljahr 1992/93 und 1993/94 ergeben sich in den allgemeinbildenden Schulen der neuen Länder und Berlin (Ost) folgende Schülerzahlen nach Klassen:

Schuljahr	Schüler 1992/93	Schüler 1993/94
12. Klasse	38 000	44 200
11. Klasse	48 400	58 000
10. Klasse	152 500	166 800
9. Klasse	196 000	204 900
8. Klasse	213 300	218 100
7. Klasse	221 200	224 800

Nach diesem Ergebnis ist sowohl für 1995 als auch 1996 noch mit steigenden Schulabgängerzahlen zu rechnen, wengleich mit abnehmenden Raten. Ab 1997, spätestens ab 1998, dürfte die Schulabgängerzahl aus allgemeinbildenden Schulen wieder abnehmen.

Auf der Grundlage der vorliegenden Schülerzahlen und einer Modellrechnung der Abgangs- und Übergangsströme ergeben sich folgende Größenordnungen von Schulabgängern aus allgemeinbildenden Schulen für die neuen Länder und Berlin (Ost):

	Sek I	Sek II	Insgesamt	Anstieg
1994:	145 700	41 000 <sup>1)</sup>	186 700	5,2%
1995:	151 100	57 300	208 400	11,6%
1996:	153 700	63 500	217 200	4,2%

<sup>1)</sup> – 8100 Schüler (Einführung des 13. Schuljahrs in Gymnasien und Gesamtschulen in Brandenburg)

<sup>1)</sup> Vgl. Teil II, Kapitel 3.1.2

<sup>2)</sup> Vgl. Teil II, Kapitel 1.3

<sup>3)</sup> Vgl. Tabelle 1/8 im Anhang

<sup>4)</sup> „Vorausberechnung der Schüler- und Absolventenzahlen 1991 bis 2010“, in: 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sministerkonferenz, Heft 123, März 1993

<sup>1)</sup> Vgl. Teil II, Kapitel 1.5

## 2.2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Die Entwicklung der Zahl der Schulabgänger ist wesentlich bestimmt von der Sonderentwicklung in der gymnasialen Oberstufe Brandenburgs. Ohne diese Entwicklung wäre die Absolventenzahl aus allgemeinbildenden Schulen 1994 um knapp 10% gestiegen und würde 1995 um gut 7% steigen. Insoweit ist davon auszugehen, daß 1995 die Zahlen der Absolventen aus allgemeinbildenden 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 bis auf Brandenburg – spürbar geringer wachsen werden als im Vorjahr. 1996 ist mit einem weiteren Abklingen des demografisch bedingten Absolventenanstiegs zu rechnen.

Zeitlich verzögert dürfte sich die demografisch bedingte Entwicklung auch in de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der neuen Länder niederschlagen. Gegenwärtig ist die Schülerentwicklung in den beruflichen Schulen auch durch den Auf- und Ausbau der beruflichen 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bestimmt. Nach Informationen der Statistischen Landesämter befanden sich im Schuljahr 1992/93 knapp 75 000 Schüler in den verschiedenen berufsbildenden Vollzeitschulen der neuen Länder, im Schuljahr 1993/94 bereits knapp 100 000; das schließt Schüler des Berufsgrundbildungsjahres, des Berufsvorbereitungsjahres, der Berufsfachschulen, der Fachoberschulen, der Fachgymnasien und der Schulen des Gesundheitswesens mit ein.

Unter Berücksichtigung mehrjähriger Schulformen dürften nach einer überschlägigen Schätzung folgende Absolventen-Größenordnungen aus den beruflichen Vollzeitschulen (ohne Schulen des Gesundheitswesens) zu erwarten sein:

	Insgesamt
1994:	34 500 <sup>1)</sup>
1995:	41 100
1996:	48 800

<sup>1)</sup> Sonderentwicklung in Brandenburg berücksichtigt

### *Einschätzung der Nachfrageentwicklung*

Für die Vorausschätzung der Nachfrage nach Ausbildungsplätzen sind folgende Übergangsquoten unterstellt worden, für Absolventen der Sekundarstufe I 70% und für Absolventen der gymnasialen Oberstufe 30%.

Verbindet man diese Übergangsquoten mit den geschätzten Absolventenzahlen, ergibt dies folgende Nachfragegrößen (für 1994 wurde mit dem gleichen Verfahren eine Kontrollrechnung durchgeführt):

	Sek II	Sek I	berufl. Schule	Insgesamt	Anstieg
1994:	12 300	102 000	20 700	135 000	9,8%
1995:	17 200	105 800	24 300	147 300	9,1%
1996:	19 100	107 600	29 700	156 400	6,2%

Nach dieser Schätzung wird die Nachfrage 1995 im Vergleich zu 1994 voraussichtlich um rund 12 000 Jugendliche und 1996 noch einmal um knapp 9 000 zunehmen.

### *Einschätzung des Bedarfs an Ausbildungsplätzen 1995*

Nach der Nachfragevorausschätzung ist gegenüber 1994 ein Aufwuchs von 12 000 angebotenen Ausbildungsplätzen erforderlich. Dabei wird unterstellt, daß sich das Mobilitätsverhalten der Jugendlichen aus den neuen Ländern nicht nennenswert ändert (rund 15 000 Westpendler). Dieser Zuwachs an Ausbildungsnachfrage macht es jedoch erforderlich, das

betriebliche Ausbildungsplatzangebot nachhaltig auszuweiten. Angesichts der günstigen konjunkturellen Aussichten wird dies in größerem Umfang möglich sein.

Beschäftigungseinbrüche und allgemeine Wirtschaftsentwicklung sind auf der Ausbildungsseite bislang durch staatliche Förderprogramme am Ende kompensiert worden. Angesichts von Aufwärtstrends für Wirtschaft und Beschäftigung muß die Wirtschaft für die Sicherung des Fachkräftenachwuchses nunmehr nachdrücklich in die Verantwortung genommen werden.

### *Möglichkeiten einer alternativen Ausbildungsförderung*

Eine große Zahl von Betrieben in den neuen Ländern macht noch kein oder ein zu geringes Angebot, obwohl sie für eine Ausbildung geeignet wären. Insoweit ist das bislang noch nicht ausreichende Ausbildungsplatzangebot der Betriebe weniger eine Kapazitätsfrage als ein Ergebnis eines noch zu geringen Stellenwertes der Berufsausbildung in den Unternehmen.

Es ist deshalb erforderlich, gemeinsam mit allen Beteiligten Möglichkeiten für eine Neuausrichtung der derzeitigen Förderpolitik zu prüfen und umzusetzen. Ziel muß es sein, Mitnahmeeffekte der Länderförderung und die betriebsferne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im Rahmen der Gemeinschaftsinitiativen zurückzuführen und eine Förderung zu entwickeln, die eine sich selbsttragende betriebliche Berufsausbildung unterstützt und mittelfristig sicherstellt.

Zu den Zielsetzungen einer darauf ausgerichteten Ausbildungsförderung gehört, neue Ausbildungskapazitäten zu erschließen und sie dauerhaft für Ausbildung zu gewinnen sowie das betriebliche Ausbildungsengagement bei ausbildenden Betrieben zu erhöhen. Wesentliche Impulse könnten von einem regionalen Aufbau einer betriebsnahen Ausbildungsinfrastruktur ausgehen, mit deren Hilfe Hemmnisse und Schwierigkeiten bei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beseitigt werden und noch nicht ausbildende Betriebe in die Lage versetzt werden, eigene Ausbildung zu betreiben.

Diese betriebsnahe Infrastruktur sollte folgendes enthalten:

- Zugehende Beratung und Informationen,
- praktische Hilfen bei der Aufnahme und Durchführung von Ausbildung für ausbildungsunerfahrene Betriebe,
- Entwicklung zusätzlichen betrieblichen Ausbildungsengagements im Rahmen von Verbundmodellen zwischen Betrieben und betriebsnahen ungenutzten Ausbildungsplätzen,
- Betreuung von Ausbildungsverbänden und anderen regionalen Ausbildungsinitiativen sowie
- intensive Ausbildungsplatzwerbung in den Regionen.

Vorrangig müssen hierbei Verbände und Organisationen der Wirtschaft tätig werden, insbesondere um Ausbildungshemmnisse festzustellen und zu überwinden. Soweit erforderlich, ist subsidiär an den Einsatz öffentlicher Mittel zu denken. Offensichtlich sind die betrieblichen Ausbildungsreserven noch nicht ausgeschöpft. Das zu erreichen, ist im wesentlichen Aufgabe der Wirtschaft selbst.

## Beschluß des Bundeskabinetts zum Berufsbildungsbericht 1995 und zur Umsetzung des Maßnahmenkatalogs der Bund-Länder-Sozialparteien-Arbeitsgruppe „Berufliche Bildung“ vom 25. April 1995

Das Bundeskabinetts nimmt den Berufsbildungsbericht 1995 und den Bericht über die Umsetzung des Maßnahmenkatalogs der Bund-Länder-Sozialparteien-Arbeitsgruppe „Berufliche Bildun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zustimmend zur Kenntnis und stellt dazu folgendes fest:

1. In den neuen Ländern ist es auch 1994 gelungen, allen Jugendlichen, die dies wünschten, einen Ausbildungsplatz anzubieten. Dies konnte allerdings nur durch den Einsatz erheblicher öffentlicher Mittel erreicht werden. Die Eigenverantwortung der Unternehmen für die Berufsausbildung muß eindeutig Vorrang haben vor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und subventionierter betrieblicher Ausbildung.

In den alten Ländern überstieg 1994 das Angebot an Ausbildungsplätzen zwar noch die Nachfrage, wenn auch in geringerem Umfang als im Vorjahr. Die Zahl der neu abgeschlossenen Ausbildungsverträge ist in der Wirtschaft und in den öffentlichen Verwaltungen jedoch wiederum zurückgegangen. Eine Fortsetzung dieses Trends gefährdet das duale System und könnte bereits mittelfristig zu einer dauerhaften Fachkräftelücke führen, die den Strukturwandel sowie Wachstum und Beschäftigungszuwachs bremst.

Die Bundesregierung hält es für vorrangig, daß auch 1995 ein ausreichendes Ausbildungsplatzangebot gesichert wird. Sie begrüßt deshalb nachdrücklich, daß sich die Repräsentanten der Wirtschaftsverbände am 15. März beim Bundeskanzler verpflichtet haben, in diesem Jahr eine Trendumkehr einzuleiten und in den nächsten beiden Jahren einen Zuwachs an Lehrstellen von ca. 10 Prozent zu verwirklichen, wobei eine überproportionale Steig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gestrebt wird; dabei wird für 1995 von rund 600000 Ausbildungsplätzen ausgegangen.

2. Die Bundesregierung setzt auf ein konzertiertes Vorgehen mit Wirtschaft, Bund, Ländern und Kommunen, damit ein ausreichendes Ausbildungsplatzangebot der Unternehmen und Verwaltungen erreicht und in den neuen Ländern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durch betriebliche Ausbildung abgelöst wird. Dazu sollten vor allem

- Betriebe, die nicht oder nicht genügend ausbilden, gezielt angesprochen werden, insbesondere auch Großunternehmen, die in den letzten Jahren Ausbildungsplätze abgebaut haben;
- regionale Ausbildungsplatzentwickler eingesetzt werden, die die Unternehmen bei der Erhöhung des Ausbildungsstellenangebots und bei der Organisation von Ausbildungsverbänden unterstützen;
- die öffentlichen Verwaltungen ebenfalls eine Trendumkehr beim Ausbildungsplatzangebot herbeiführen, wozu der Bund auch mit den Ländern und Kommunen Gespräche aufgenommen hat.

3. Die Berufsbildung muß für leistungsstärkere Jugendliche, die zunehmend in Gymnasien und Hochschulen streben, wieder attraktiver werden. Der BMBF wird bis Ende 1995 ein Förderkonzept zur Entwicklung und breiten Einführung von attraktiven und zertifizierbaren Zusatzqualifikationen mit Zukunftschancen vorlegen. Dies umfaßt auch Modelle verzahnter Aus- und Fortbildung.

Duale Ausbildungsangebote im tertiären Bereich sollten breiter erprobt und in der Umsetzung beschleunigt werden (z.B. Verbindung von betrieblicher Ausbildung und Fachhochschulstudium).

4. Der Anteil der Jugendlichen ohne Berufsausbildung muß weiter gesenkt werden. Dazu sollen die Hilfen, die Jugendlichen mit Leistungs- und Motivationsschwächen den Zugang zur Berufsausbildung und deren erfolgreichen Abschluß ermöglichen, weiterentwickelt und verstärkt werden. Erprobte innovative Modelle sollen breiter umgesetzt werden. Ferner prüfen BMBF, BMA und BMWi mit Wirtschaft und Gewerkschaften, welche bestehenden Ausbildungsberufe neu geordnet und welche neuen Ausbildungsberufe entwickelt werden können, um zusätzliche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chancen für diese Zielgruppe zu schaffen. Die Nachqualifizierungsangebote – auch unterhalb der Facharbeiterebene – für Erwachsene ohne arbeitsmarktverwertbare berufliche Qualifikation sollen verbessert und weiter ausgebaut werden.

5. Aus- und Weiterbildung müssen rascher und flexibler an Entwicklungen im Beschäftigungssystem angepaßt werden. Die Verfahren für den Erlaß von Ausbildungsordnungen sollen nicht länger als zwei Jahre dauern. In neuen zukunfts-trächtigen Beschäftigungsfeldern wird die Entwicklung und Erprobung von Ausbildungsberufen und Weiterbildungsangeboten vorangetrieben. In Abstimmung mit allen Beteiligten werden bis Ende 1995 Vorschläge für die Ordnung neuer Ausbildungsberufe vorgelegt. Ferner wird geprüft, welche Konsequenzen im Bereich der Fortbildung zu ziehen sind.

6. Zur Gleichwertigkeit beruflicher und allgemeiner Bildung gehört, daß der Zugang zu allen Bildungswegen auch über die Berufsbildung möglich ist. Die Bundesregierung erwartet von den Ländern, daß sie noch 1995 den Absolventen qualifizierter Aufstiegsfortbildung, wie z.B. Meistern, Fachwirten und Technikern, einen Hochschulzugang nach einheitlichen Kriterien ermöglichen.

7. Als weiterer Beitrag zur Attraktivität und Gleichwertigkeit beruflicher und allgemeiner Bildung wird ein entsprechendes Gesetz zur Verbesserung de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vorbereitet, das noch 1995 dem Deutschen Bundestag zur Beratung zugeleitet werden soll.

Das BMBF wird beauftragt, gemeinsam mit den betroffenen Bundesministerien, den Ländern, der Wirtschaft und den Gewerkschaften die Umsetzung der im Berufsbildungsbericht 1995 und im Bericht zum Maßnahmenkatalog der AG „Berufliche Bildung“ enthaltenen Maßnahmen zur Steigerung des Ausbildungsplatzangebots und zur dauerhaften Stärkung der beruflichen Bildung zügig voranzutreiben.



문서 번호 44

독일통일 이후 5년 - 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 [ 직업교육부분 발췌] - 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의 대정부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답변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 연방의회 [교섭단체미달]소수그룹;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이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과거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수료증 및 능력증명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연방노동청(BA)은 연방직업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독 내 직업교육필요직업군과 서독의 직업군을 서로 비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동독 체제 하에서 인민소유산업체(VEI)에 소속되었던 마이스터("VE"-Meister)들은 자영업적 수공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신연방주들 내 중산층 경제를 신속하게 재건하기 위해 인민소유산업체(VEI) 소속 마이스터("VE"-Meister)들은 다른 마이스터와 동등하게 자영업적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았다.

1994년도 2월 부터는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적응능력평가가 직장 내에서 시행되었다. 이 평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신연방에서는 동독 체제에서 상업 및 기업경영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 직업군에 대한 적응능력평가가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자격능력-능력개발-관리" 프로젝트 (QUEM)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 중인 신 연방주들 내에서 자격능력을 시장 경제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응시키는데 지원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말에 총 1,040,853 명의 근로자가 실업상태였다. 그 중 213,127 명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827,726 명은 직업교육수료자였다. 후자 중 38,477 명은 대학 졸업자 였고 7,891 명은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65,780 명은 전문학교 졸업자였다.

출처: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Abgeordneten Wolfgang Bierstedt, Dr. Dagmar Enkelmann, Dr. Barbara Höll,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Gruppe der PDS  
– Drucksache 13/1905 –**

**Fünf Jahre deutsche Einheit – Nutzung von in den neuen Ländern vorhandenen Möglichkeiten zur Sicherung bzw.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sowie zur Förderung einer umweltverträglichen Entwicklung**

### Vorbemerkung

Die vorliegende Große Anfrage umfaßt Detailfragen zu Entwicklungsprozessen in ausgewählten Bereichen der neuen Länder. Die erfaßten Segmente betreffen im einzelnen u. a. Bildung und Ausbildung, Arbeitslosenzahlen in Abhängigkeit von der Berufsausbildung, die Nutzung von ehemaligen DDR-Patenten, die Entwicklung des Absatzes ostdeutscher Produkte nach Ländern und Ländergruppen, die Entwicklung des Wohnungsbaus und der Wohnungsbauförderung in alten und neuen Ländern, die Arbeit der Management-KGs, die Veräußerungspraxis der Treuhandanstalt, die Entwicklung der Produktion ausgewählter Erzeugnisse auf dem Gebiet der neuen Länder seit 1939, Aufkommen und Verwertung von sog. Sekundärrohstoffen, die Entwicklung des Gütertransports auf der Schiene.

Die hierin zum Ausdruck kommende Heterogenität und Selektivität der Fragestellungen veranlassen die Bundesregierung nachdrücklich darauf hinzuweisen, daß die in den Antworten enthaltenen Daten und Informationen keinesfalls – wie durch den Titel der Großen Anfrage suggeriert – eine umfassende Gesamt-

schau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wie auch der politischen Leistungen in fünf Jahren Deutscher Einheit darstellen.

Umfassende, alle Teilaspekte der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eleuchtende Dokumentationen hat die Bundesregierung dem Deutschen Bundestag im September 1995 mit dem Bericht „Aufbau Ost – die zweite Hälfte des Wegs: Stand und Perspektiven“ (Drucksache 13/2489) sowie de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ucksache 13/2280) zugeleitet. Berichte wie „Materialien“ verdeutlichen, in welchem Umfang die Bundesregierung seit Beginn des Einigungsprozesses in allen relevanten Politikbereichen gehandelt hat, um das in 40 Jahren sozialistischer Mißwirtschaft heruntergewirtschaftete Potential der ostdeutschen Wirtschaft auf nachhaltige Weise zu erneuern. Diese Politik hat entscheidend dazu beigetragen, die Entwicklungschancen und Entfaltungsmöglichkeiten der ostdeutschen Bürger und Bürgerinnen auf breiter Front zu verbessern, was sich nicht zuletzt an der Entwicklung zentraler ökonomischer Indikatoren wie dem Bruttoinlandsprodukt, der Investitionstätigkeit oder auch der Zahl der Existenzgründungen ablesen läßt.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vom 28. November 1995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 Berufliche Bildung

Nach dem Einigungsvertrag gelten alle in der DDR erworbenen oder staatlich anerkannten beruflichen Abschlüsse und Befähigungsnachweise – wie auch im schulischen und akademischen Bereich – in den neuen Ländern weiter. Die abgelegten Prüfungen bzw. Befähigungsnachweise stehen Prüfungen in den alten Ländern gleich und verleihen die gleichen Berechtigungen, wenn die Abschlüsse und Befähigungsnachweise einander gleichwertig sind (Artikel 37 Abs. 1 des Einigungsvertrages).

Im Bereich der beruflichen Bildung stehen laut Einigungsvertrag Prüfungszeugnisse nach der Systematik der Ausbildungsberufe und der Systematik der Facharbeiterberufe sowie Abschlußprüfungen und Gesellenprüfungen in anerkannten Ausbildungsberufen einander gleich, ohne daß es einer behördlichen Feststellung bedarf.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hat im Zusammenwirken mit de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eine Dokumentation herausgegeben, in der DDR-Ausbildungsberufe mit Beruf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glichen werden.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hat am 6. Dezember 1991 die „Verordnung über die Anerkennung von Ausbildungsabschlüssen von Meistern der volkseigenen Industrie als Voraussetzung für die Eintragung in die Handwerksrolle“ (BGBl. I S. 2162) erlassen; die Verordnung ist am 1. Januar 1992 in Kraft getreten.

Damit wurde Meistern der volkseigenen Industrie („VE“-Meister) der Zugang zur selbständigen Handwerksausübung eröffnet. Im Interesse eines zügigen Aufbaus ein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hielten sie die gleichen Chancen zu einer selbständigen gewerblichen Tätigkeit, wie sie auch den Handwerksmeistern der DDR eingeräumt sind.

Anträge auf Eintragung in die Handwerksrolle können noch bis zum 31. Dezember 1997 gestellt werden.



Für „VE“-Meister, die als Industriemeister tätig sein wollen, haben die Sozialpartner eine Liste erstellt, in denen „VE“-Meisterabschlüsse Industriemeisterabschlüssen zugeordnet sind. Über die Zuordnung stellen die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eine Bescheinigung aus.

In den neuen Ländern hat – zeitlich befristet – ab Februar 1994 berufsbegleitend eine Anpassungsqualifizierung auf dem Gebiet der sozialen Arbeit begonnen. Sie ist für bereits seit längerem in diesem Arbeitsfeld Tätige ohne entsprechenden Berufsabschluß vorgesehen und wird an von den jeweiligen Ländern festgelegten sozialpädagogischen Fachschulen durchgeführt. Auf ausdrücklichen Wunsch der Länder Sachsen-Anhalt, Thüringen und Sachsen förder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in diesem Zusammenhang das Projekt zur Entwicklung des Curriculums „Fachkraft für soziale Arbeit“ einschließlich der Erstellung entsprechender Lehrmaterialien. Diese Länder beabsichtigen Maßnahmen zur gegenseitigen Anerkennung des mit dieser Qualifizierungsmaßnahme erreichbaren Fachschulabschlusses „Fachkraft für soziale Arbeit“.

Gleichfalls ab Februar 1994 begann in den neuen Ländern eine Anpassungsqualifizierung für kaufmännische und betriebswirtschaftliche Fachschulberufe der ehemaligen DDR. Es handelt sich um eine Zusatzausbildung, wie sie im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zur „Feststellung der Gleichwertigkeit von Bildungsabschlüssen – Fachschulbereich“ vom 7. Mai 1993 im Sinne des Art. 37 des Einigungsvertrages gefordert wird. Diese Maßnahme wird an von den Ländern festgelegten Schulträgern bzw. privaten Weiterbildungseinrichtungen organisiert und durchgeführt. Sie schließt mit einer staatlichen Abschlußprüfung ab und führt zum Abschluß als staatlich geprüfte/r Betriebswirt/in. Auf ausdrücklichen Wunsch der neuen Länder fördert da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in diesem Zusammenhang auch die entsprechende Curriculumentwicklung. Mit dieser Maßnahme ist eine verfahrensmäßig einheitliche Behandlung von Anträgen auf Feststellung der Gleichwertigkeit der Bildungsabschlüsse kaufmännischer und betriebswirtschaftlicher Fachschulberufe der ehemaligen DDR möglich, und die arbeitsmarktpolitischen Aussichten dieser Personengruppe werden dadurch verbessert. Davon unberührt bleibt die Möglichkeit des Erwerbs eines Fachhochschuldiploms entsprechend des Beschlusse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10./11. Oktober 1991.

Das vom ehemaligen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1 initiierte und von 1992 bis 1995 geförderte Projekt „Qualifikations-Entwicklungs-Management“ (QUEM) hat die Zielsetzung, die Anpassung der Qualifikationen beim Umbau vom Plan zum Mark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unterstützen. Hierdurch wird auch der Aufbau einer praxisorientierten, wissenschaftlichen Infrastruktur für die beruflich-betriebliche Weiterbildung, die Weiterbildungsforschung, die Qualifizierung von Multiplikatoren der beruflich-betrieblichen Weiterbildung sowie die Ent-

wicklung und Erprobung von Qualifizierungskonzepten für ausgewählte Zielgruppen unterstützt. Die Bundesregierung stellte für diese Maßnahmen und Projekte von 1991 bis 1995 insgesamt ca. 40 Mio. DM bereit.

Im Wege der Projektförderung wird seit Ende 1993 ein postgradualer Studiengang Personalentwicklung entwickelt und ab 1995 umgesetzt sowie evaluiert. Ziel dieses Studienganges sind vor allem die Vermittlung und Erhöhung der Fachqualifikationen (Kenntnisse und Fertigkeiten zu planen, Durchführen und Evaluieren von Personalentwicklungsarbeiten), Methodenqualifikationen (z. B. Kenntnisse und Fertigkeiten zum Analysieren von Arbeitsaufgaben, Organisationsstrukturen und Prozeßketten unter personalentwicklungsrelevanten Gesichtspunkten u. a.), soziale Qualifikationen (Fähigkeiten zur Aufgabenlösung, zum Aufgaben- und Konfliktmanagement) und personale Qualifikationen. Hierfür liegen Studienplan, Organisationsplan, Studienordnung sowie Prüfungsordnung vor. Der Studiengang soll nach erfolgreicher Teilnahme und einer Studiendauer von zwei Jahren mit einem Zertifikat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Chemnitz-Zwickau enden. Die ersten Studiendurchgänge haben Ende 1994 bzw. Anfang 1995 mit insgesamt 55 Teilnehmern begonnen.

2. Welcher Anteil der Arbeitslosen in den einzelnen neuen Ländern verfügt über ei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Welcher Anteil ist das bei Frauen?

Welche Angaben ergeben sich jeweils für Erwerbslose?

#### Vorbemerkung

Die Angaben zu den Fragen 2 bis 6 und 26 beruhen auf der Erhebung zur Struktur der Arbeitslosen Ende September 1994 im Bundesgebiet Os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ie Absolventen der Fachschulen der DDR wurd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zum Teil mit Absolventen der Fachhochschulen, zum Teil mit Absolventen von Fachschulen oder Berufsfach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eichgestellt. Daher werden zur Beantwortung der Fragen 3, 4, 6 und 26 die Zahlen der arbeitslosen Fachhochschul- und Fachschulabsolventen genannt. Eine Trennung in Absolventen, nach Abschluß vor oder nach Einführung des Bildungs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nicht möglich.

Angaben zu der Zahl der „Erwerbslosen mit bestimmten Qualifikationen“ können nicht gemacht werden. Die „Erwerbslosen“, also Personen, die keinem Erwerb nachgehen wie Rentner, ehemalige Arbeitnehmer und Selbständige, die sich aus dem Erwerbsleben zurückgezogen haben, werden, mit Ausnahme der Arbeitslosen, statistisch nicht nach Qualifikationen erfaß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aren Ende September 1994 insgesamt 1 040 853 Arbeitnehmer arbeitslos gemeldet, darunter 213 127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und 827 726 mit abgeschlossener Berufs-

ausbildung. Die Verteilung auf die einzelnen Bundesländer und der Anteil der Männer und Frauen ist der nachfolgenden Tabelle zu entnehmen:

Mecklenburg-Vorpommern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11 513	18 161	29 674
Anteil in Prozent	25	22	23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35 099	64 564	99 663
Anteil in Prozent	75	78	77
Insgesamt	46 612	82 725	129 337
Brandenburg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14 337	25 461	39 798
Anteil in Prozent	27	23	24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39 310	84 407	123 717
Anteil in Prozent	73	77	76
Insgesamt	53 647	109 868	163 515
Berlin-Ost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7 200	8 635	15 835
Anteil in Prozent	21	21	21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27 059	32 073	59 132
Anteil in Prozent	79	79	79
Insgesamt	34 259	40 708	74 967
Sachsen-Anhalt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15 544	30 669	46 213
Anteil in Prozent	22	23	23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53 554	104 794	158 348
Anteil in Prozent	78	77	77
Insgesamt	69 098	135 463	204 561
Sachsen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16 703	34 724	51 427
Anteil in Prozent	20	17	18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68 273	174 057	242 330
Anteil in Prozent	80	83	82
Insgesamt	84 976	208 781	293 757
Thüringen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10 067	20 113	30 180
Anteil in Prozent	18	17	17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45 613	98 923	144 536
Anteil in Prozent	82	83	83
Insgesamt	55 680	119 036	174 716
Neue Länder insgesamt	Männer	Frauen	Insgesamt
Ohne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75 364	137 763	213 127
Anteil in Prozent	22	20	20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268 908	558 818	827 726
Anteil in Prozent	78	80	80
Insgesamt	344 272	696 581	1 040 853

3. Wie viele Arbeitslose in den einzelnen neuen Ländern verfügen über ein Hoch- und Fachschulstudium?

Wie viele Frauen betrifft das?

Welche Angaben ergeben sich jeweils für Erwerbslose?

Ende September 1994 verfügten 38 477 Arbeitslos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über ein abgeschlossenes Hochschulstudium und 7 891 über ein abgeschlossenes Fachhochschulstudium, 65 780 waren Absolventen von Fachschulen. Die Verteilung auf die einzelnen Bundesländer und die Anteile der Männer und Frauen ergeben sich aus der nachfolgenden Tabelle:

Mecklenburg-Vorpommern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2 160	27,4	5 732	72,6	7 892
Fachhochschule	485	49,7	495	50,5	980
Hochschule/Universität	2 078	57,0	1 565	43,0	12 515
Insgesamt	4 723	37,7	7 792	62,3	12 515
Brandenburg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3 073	31,6	6 648	68,4	9 721
Fachhochschule	772	58,9	539	41,1	1 311
Hochschule/Universität	2 719	59,7	1 835	40,3	4 554
Insgesamt	6 564	42,1	9 022	57,9	15 586
Berlin-Ost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2 614	38,3	4 208	61,7	6 822
Fachhochschule	691	63,6	396	36,4	1 087
Hochschule/Universität	4 830	59,1	3 337	40,0	8 167
Insgesamt	8 135	50,6	7 941	49,4	16 076
Sachsen-Anhalt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3 183	30,3	7 328	69,7	10 511
Fachhochschule	708	55,4	569	44,6	1 277
Hochschule/Universität	2 925	54,0	2 493	46,0	5 418
Insgesamt	6 816	39,6	10 390	60,4	17 208
Sachsen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6 062	31,5	13 179	68,5	19 241
Fachhochschule	1 039	54,5	866	45,5	1 905
Hochschule/Universität	6 315	55,6	5 051	44,4	11 366
Insgesamt	13 416	41,3	19 096	58,7	32 512
Thüringen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3 583	30,9	8 010	69,1	11 593
Fachhochschule	653	49,1	678	50,9	1 331
Hochschule/Universität	3 008	56,4	2 321	43,6	5 329
Insgesamt	7 244	39,7	11 009	60,3	18 253
Neue Länder insgesamt	Männer	in %	Frauen	in %	Insgesamt
Fachschule	20 675	31,4	45 105	68,6	65 780
Fachhochschule	4 348	55,1	3 543	44,9	7 891
Hochschule/Universität	21 875	56,9	16 602	43,1	38 477
Insgesamt	46 898	41,8	65 250	58,2	112 148



문서 번호 45

독일통일 이후 5년 - 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 [대학 부분 발췌]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연방경제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54개 대학교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접근성의 정도, 연구시설과 설비 그리고 국제적 학술교류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동독 대학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학사조직과 (장학금, 주거공간의 제공, 자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탁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1996년 말까지 24억 3백만 마르크를 구동독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 중 연방정부가 75 퍼센트를, 연방주들이 25 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연방주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방주의적 원칙 하에 새로운 대학교 체계가 이 지역에 구축되었다. 구동독지역에는 이제 15개 종합대학교, 21개 공공 전문대학교 및 12개 미술 및 음악대학교가 존재한다. 1989년도와 비교하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9,500명 감축되었다. 교수직의 수는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새로운 교수 임용 절차들이 1995년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경제부는 구동독지역 산업부문에서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였다.

출처: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Abgeordneten Wolfgang Bierstedt, Dr. Dagmar Enkelmann, Dr. Barbara Höll,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Gruppe der PDS  
– Drucksache 13/1905 –**

**Fünf Jahre deutsche Einheit – Nutzung von in den neuen Ländern vorhandenen Möglichkeiten zur Sicherung bzw.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sowie zur Förderung einer umweltverträglichen Entwicklung**

### Vorbemerkung

Die vorliegende Große Anfrage umfaßt Detailfragen zu Entwicklungsprozessen in ausgewählten Bereichen der neuen Länder. Die erfaßten Segmente betreffen im einzelnen u. a. Bildung und Ausbildung, Arbeitslosenzahlen in Abhängigkeit von der Berufsausbildung, die Nutzung von ehemaligen DDR-Patenten, die Entwicklung des Absatzes ostdeutscher Produkte nach Ländern und Ländergruppen, die Entwicklung des Wohnungsbaus und der Wohnungsbauförderung in alten und neuen Ländern, die Arbeit der Management-KGs, die Veräußerungspraxis der Treuhandanstalt, die Entwicklung der Produktion ausgewählter Erzeugnisse auf dem Gebiet der neuen Länder seit 1939, Aufkommen und Verwertung von sog. Sekundärrohstoffen, die Entwicklung des Gütertransports auf der Schiene.

Die hierin zum Ausdruck kommende Heterogenität und Selektivität der Fragestellungen veranlassen die Bundesregierung nachdrücklich darauf hinzuweisen, daß die in den Antworten enthaltenen Daten und Informationen keinesfalls – wie durch den Titel der Großen Anfrage suggeriert – eine umfassende Gesamt-

schau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wie auch der politischen Leistungen in fünf Jahren Deutscher Einheit darstellen.

Umfassende, alle Teilaspekte der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eleuchtende Dokumentationen hat die Bundesregierung dem Deutschen Bundestag im September 1995 mit dem Bericht „Aufbau Ost – die zweite Hälfte des Wegs: Stand und Perspektiven“ (Drucksache 13/2489) sowie de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ucksache 13/2280) zugeleitet. Berichte wie „Materialien“ verdeutlichen, in welchem Umfang die Bundesregierung seit Beginn des Einigungsprozesses in allen relevanten Politikbereichen gehandelt hat, um das in 40 Jahren sozialistischer Mißwirtschaft heruntergewirtschaftete Potential der ostdeutschen Wirtschaft auf nachhaltige Weise zu erneuern. Diese Politik hat entscheidend dazu beigetragen, die Entwicklungschancen und Entfaltungsmöglichkeiten der ostdeutschen Bürger und Bürgerinnen auf breiter Front zu verbessern, was sich nicht zuletzt an der Entwicklung zentraler ökonomischer Indikatoren wie dem Bruttoinlandsprodukt, der Investitionstätigkeit oder auch der Zahl der Existenzgründungen ablesen läßt.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vom 28. November 1995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 Hochschulen

Die DDR verfügte mit 54 Hochschulen über ein Hochschulsystem, das mit Einschränkungen den Anforderungen in Ausbildung und Forschung gerecht werden konnte. Diese Einschränkungen bezogen sich insbesondere auf den Umfang des Zugangs, die Breite der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die technische und bauliche Infrastruktur sowie den internationalen Wissenschaftsaustausch. Beachtenswerte Leistungen lagen in einer effizienten Studienorganisation, teilweise hervorragenden Ausbildungsmöglichkeiten auf künstlerischem und musikalischem Gebiet, einem vielfältigen Weiterbildungs- und Fernstudienangebot und sozialen Rahmenbedingungen wie Stipendien, Wohnraumversorgung und Betreuungsmöglichkeiten für Studierende mit Kindern.

Mit dem Einigungsvertrag (Art. 38) wurden die Grundlagen für die Einbeziehung der Hochschulen in die rahmen- und personalrechtliche Ausgestaltung des Hochschulbereichs sowie den Hochschulbau und die Ausbildungsförderung geschaffen. Auf dieser Grundlage erarbeitete der Wissenschaftsrat fachbereichsbezogen länderübergreifende Empfehlungen.

Mit dem Erneuerungsprogramm für Hochschule und Forschung in den neuen Ländern (Hochschulernerneuerungsprogramm) vom Juli 1991, das im Juli 1992 überprüft und auf insgesamt 2,43 Mrd. DM aufgestockt wurde, stellten Bund und neue Länder Soforthilfen zur personellen Erneuerung der Hochschulen zum Erhalt des wissenschaftlichen Potentials und zur Sicherung der Infrastruktur in Wissenschaft und Forschung bereit. Die Mittel werden für die Laufzeit bis Ende 1996 von Bund und neuen Ländern einschließlich Berlin im Verhältnis 75 : 25 aufgebracht. Bis Ende 1993 wurden 1,238 Mrd. DM für die Erneuerung der Hochschu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gesetzt, 1994 standen 417 Mio. DM zur Verfügung; für 1995 sind 410 Mio. DM vorgesehen.

Auf der Grundlage der bundesrechtlichen Regelungen und der von den Ländern erlassenen Hochschulernerneuerungs- und Hochschulgesetze ist es gelungen, ein föderal strukturiertes Hochschulsystem mit Selbstverwaltung und gesetzlich gesicherter Eigenverantwortung zu schaffen. In den neuen Ländern besteht heute ein regional und fachlich sowie institutionell differenziertes Angebot an Hochschuleinrichtungen mit 15 Universitäten und ihnen gleichgestellten Hochschulen, 21 öffentlichen Fachhochschulen sowie zwölf Kunst- und Musikhochschulen.

Im Zuge der Erneuerung hat der Personalbestand der Hochschulen deutliche Veränderungen erfahren. Nach der Personalplanung der neuen Länder (einschließlich Ost-Berlin) verfügten die Hochschulen im Jahre 1994 über 35 100 Stellen (ohne Medizin), davon etwa je die



Hälfte für wissenschaftliches und künstlerisches bzw. Verwaltungs-, technisches und sonstiges Personal. Im Vergleich zu 1989 ist damit der Personalbestand um 29 500 Stellen verringert worden; gegenüber dem Planungsansatz von 1992 hat sich der Personalbestand der Hochschulen um 4 700 Stellen vermindert. Die Zahl der Professorenstellen ist mit 6 700 (ohne Medizin) gegenüber 1989 annähernd konstant geblieben. Mitte 1993 waren etwa 40 % der Professorenstellen besetzt, ein Jahr später bereits 70 %. Ein vorläufiger Abschluß des Berufungsgeschehens im Zusammenhang mit der Erneuerung ist für Ende 1995 zu erwarten. Knapp zwei Drittel der neu berufenen Professoren insgesamt und ca. die Hälfte der an eine Universität berufenen Professoren komm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Auf Professuren in besonders erneuerungsbedürftigen und neu aufzubauenden Fächern wurden überwiegend Wissenschaftl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berufen.

Die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im Hochschulbereich ist trotz der Komplexität der Aufgaben im Rahmen der föderalen Grundordnung rasch und im großen und ganzen erfolgreich erreicht worden. Die Hochschulen der neuen Länder sind gleichberechtigt in den internationalen Wissenschaftsaustausch einbezogen.

#### Forschung und Entwicklung in der Wirtschaft

Die Bundesregierung hat bereits 1990 Sonderprogramme zur Förderung von Forschung und Entwicklung in der Wirtschaft der neuen Länder begonnen, die sich auf die Aktivierung des vorhandenen Potentials an Hoch- und Fachschulabsolventen sowie an Meistern und Facharbeitern richteten.

Beispielsweise werden durch die – im September 1990 durch das damalige Bundesministerium für Forschung und Technologie – gestarteten Förderprogramme

- technologieorientierte Unternehmensgründungen, 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bei der Gründung eigener hochinnovativer Unternehmen unterstützt,
- bei FuE-Personal-Zuwachsförderung die Neueinstellung arbeitsloser oder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r Forscher und Entwickler mit Hoch- oder Fachschulabschluß gefördert und
- durch die Auftragsforschung und -entwicklung die Förderung von FuE-Projekten unterstützt und somit Arbeitsplätze von in Forschungseinrichtungen und Unternehmen tätigen FuE-Beschäftigten mit Hoch- und Fachschul- sowie Meister- und Facharbeiterqualifikation gesicher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hat von Mitte 1990 bis Ende 1994 mit einem Bündel von Fördermaßnahmen etwa 1,1 Mrd. DM zur Verfügung gestellt, um die Umstrukturierung der vorhandenen FuE-Potentiale und die Stärkung der Innovationskraft der Unternehmen zu unterstützen. In 1995 werden dafür rd. 450 Mio. DM eingesetzt.

Programme, die insbesondere auch an der Förderung von FuE-Personal ansetzen, sind:

– die Personalförderung Ost:

Sie regt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an, ihre Personalbasis zu stärken und auszubauen sowie bestehende FuE-Potentiale zu erhalten. 1994 wurden für 1 576 Unternehmen Zuschüsse von 67,1 Mio. DM zur Verfügung gestellt.

– die marktvorbereitende Industrieforschung:

Sie unterstützt den Umstrukturierungsprozeß der vorrangig FuE treibende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Forschungs-GmbHs). 1994 förderte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die Durchführung von 746 FuE-Projekten in 63 Forschungs-GmbHs, 99 FuE-Dienstleistungs- und 92 anderen innovativen Unternehmen mit rd. 150 Mio. DM.

– die Innovationsförderung:

Sie unterstützt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des Produzierenden Gewerbes bei der Entwicklung neuer Produkte und Verfahren. Im Jahr 1994 wurden 80 Mio. DM für 504 FuE-Projekte in 431 Firmen verausgabt.



문서 번호 46

독일통일 이후 5년 - 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 [ 대학외 연구분야 발췌]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대학 외 연구기관은 주로 3개의 학술원에 소속되었다. 이들 연구소의 시설과 설비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연구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었다. 연방정부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달했던” 중요한 연구들도 있었다.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들 연구소들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방주들의 산하 기관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300 명이 넘는 국내 및 외국의 학자들이 1990년 가을까지 이루어진 심사에 참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와 연방주는 13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제공했다. 연구인력을 포함한 연구소 인력과의 고용관계는 우선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뒤따른 사회적 후속 영향들은 특히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을 통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1992년도에서 1996년도까지 지속되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교육부는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구동독지역 연구 부문에 총 108억 마르크를 지출했다. 1995년도의 경우 이는 32억 마르크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 설립된 신규 연구소들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설과 설비 문제 등은 계속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출처: Parlementsdoc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3123



##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Abgeordneten Wolfgang Bierstedt, Dr. Dagmar Enkelmann, Dr. Barbara Höll,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Gruppe der PDS  
– Drucksache 13/1905 –**

**Fünf Jahre deutsche Einheit – Nutzung von in den neuen Ländern vorhandenen Möglichkeiten zur Sicherung bzw.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sowie zur Förderung einer umweltverträglichen Entwicklung**

### Vorbemerkung

Die vorliegende Große Anfrage umfaßt Detailfragen zu Entwicklungsprozessen in ausgewählten Bereichen der neuen Länder. Die erfaßten Segmente betreffen im einzelnen u. a. Bildung und Ausbildung, Arbeitslosenzahlen in Abhängigkeit von der Berufsausbildung, die Nutzung von ehemaligen DDR-Patenten, die Entwicklung des Absatzes ostdeutscher Produkte nach Ländern und Ländergruppen, die Entwicklung des Wohnungsbaus und der Wohnungsbauförderung in alten und neuen Ländern, die Arbeit der Management-KGs, die Veräußerungspraxis der Treuhandanstalt, die Entwicklung der Produktion ausgewählter Erzeugnisse auf dem Gebiet der neuen Länder seit 1939, Aufkommen und Verwertung von sog. Sekundärrohstoffen, die Entwicklung des Gütertransports auf der Schiene.

Die hierin zum Ausdruck kommende Heterogenität und Selektivität der Fragestellungen veranlassen die Bundesregierung nachdrücklich darauf hinzuweisen, daß die in den Antworten enthaltenen Daten und Informationen keinesfalls – wie durch den Titel der Großen Anfrage suggeriert – eine umfassende Gesamt-

schau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wie auch der politischen Leistungen in fünf Jahren Deutscher Einheit darstellen.

Umfassende, alle Teilaspekte der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beleuchtende Dokumentationen hat die Bundesregierung dem Deutschen Bundestag im September 1995 mit dem Bericht „Aufbau Ost – die zweite Hälfte des Wegs: Stand und Perspektiven“ (Drucksache 13/2489) sowie de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ucksache 13/2280) zugeleitet. Berichte wie „Materialien“ verdeutlichen, in welchem Umfang die Bundesregierung seit Beginn des Einigungsprozesses in allen relevanten Politikbereichen gehandelt hat, um das in 40 Jahren sozialistischer Mißwirtschaft heruntergewirtschaftete Potential der ostdeutschen Wirtschaft auf nachhaltige Weise zu erneuern. Diese Politik hat entscheidend dazu beigetragen, die Entwicklungschancen und Entfaltungsmöglichkeiten der ostdeutschen Bürger und Bürgerinnen auf breiter Front zu verbessern, was sich nicht zuletzt an der Entwicklung zentraler ökonomischer Indikatoren wie dem Bruttoinlandsprodukt, der Investitionstätigkeit oder auch der Zahl der Existenzgründungen ablesen läßt.

*Die Antwort wurde namens der Bundesregierung mit Schreib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vom 28. November 1995 übermittelt.*

*Die Drucksache enthält zusätzlich – in kleinerer Schrifttype – den Fragetext.*

1. Was hat die Bundesregierung seit 1990 unternommen, damit das in der DDR vorhandene Potential, insbesondere Hoch- und Fachschul- sowie Meister- und Facharbeiterqualifikationen, als Standortvorteil nicht verkümmert, sondern aktiv wirksam werden kann?

#### Außeruniversitäre Forschung

Mit dem Neuaufbau der ostdeutschen Wissenschaft und Forschung hat die Bundesregierung in einem Kernbereich unserer Zukunftssicherung maßgeblich zu einem erfolgreichen Kapitel des Vereinigungsprozesses beigetragen und eine Basis für den Aufschw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schaffen.

Die Aufgabe, die der Bund – zusammen mit den neuen Ländern und den großen Wissenschaftsorganisationen – zu lösen hatte, war quantitativ und qualitativ ohne Vorbild. Die alten zentralstaatlichen Strukturen sollten und mußten abgelöst werden; gute und wichtige Kapazitäten der Forschung waren in der neuen föderalen Ordnung zu erhalten und zu fördern. Ziel war die Einpassung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in die gemeinsame Forschungsstruktu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außeruniversitäre Forschung der DDR war ganz überwiegend in drei Akademi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Akademie der Landwirtschaftswissenschaften, Bauakademie) betrieben worden. Hier waren Ende 1989 insgesamt mehr als 30 000 Personen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beschäftigt, darunter ca. 14 400 Wissenschaftler. Der Anteil an nicht unmittelbar mit Forschung und Entwicklung beschäftigtem Personal in den jeweiligen Einrichtungen war hoch. Erhebliche Defizite wie mangelnde Investitionen oder unzulängliche Geräteausstattung fanden ihre Entsprechung in einer hohen Personalintensität der Forschung.

Trotz dieser Bedingungen waren aber auch bedeutende Forschungsleistungen erbracht worden, an die angeknüpft werden konnte. Einzelne Forschungsfelder wiesen ein hohes, teilweise internationales Standard entsprechendes Niveau auf. So beispielsweise auf den Gebieten von Hochenergiephysik, Festkörperphysik, Molekularbiologie, Geoökologie, Materialforschung, Ernährungsforschung, Pflanzenforschung, Geowissenschaften, Mathematik sowie in einer Reihe geisteswissenschaftlicher Projekte.

Artikel 38 des Einigungsvertrages legte zur notwendigen Erneuerung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und der Erhaltung leistungsfähiger Einrichtungen eine Begutachtung von öffentlich getragenen Einrichtungen durch den Wissenschaftsrat fest. Um die Begutachtung durch den Wissenschaftsrat zu ermöglichen, sollten die Institute und Einrichtungen der Akademien bis zum 31. Dezember 1991 als Ländereinrichtungen fortbestehen, soweit sie nicht vorher aufgelöst oder umgewandelt wurden. Bis zu diesem Datum wurde eine gemeinsame Übergangsfinanzierung durch Bund und Länder gewährleistet, die sich auf insgesamt 1,3 Mrd. DM belief.

Damit waren auch die Voraussetzungen dafür geschaffen worden, daß die Arbeitsverhältnisse der Mitarbeiter der Institute bis zur Begutachtung durch den Wissenschaftsrat, längstens bis zum Ende der Übergangsphase am 31. Dezember 1991, fortbestanden, dann aber – mit der Auflösung der bisherigen Institute – beendet wurden. Damit wurde ein besonderer Weg für das Personal in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Forschung eröffnet. Die erheblichen sozialen Auswirkungen des Umbauprozesses konnten mit Mitteln der Übergangsfinanzierung, durch das im Hochschulneuerungsprogramm vorgesehene Wissenschaftler-Integrations-Programm sowie durch Arbeitsplatzbeschaffungsmaßnahmen im Forschungs- und Technologiebereich flankiert werden.

Im September 1991 schloß der Wissenschaftsrat die Evaluation mit Stellungnahmen zur Forschung der ehemaligen Akademien und mit Empfehlungen zur Neustrukturierung ab. Mehr als 300 in- und ausländische Wissenschaftler hatten in Arbeitsgruppen vom Herbst 1990 bis zum Sommer 1991 die ca. 130 Forschungs- und Service-Einrichtungen der Akademien begutachtet. Sie bewerteten die wissen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Einrichtungen und empfahlen in dem Gutachten die künftige wissenschaftliche Zielsetzung, die Größe und die Struktur sowie die künftige personelle und apparative Ausstattung der neu zu gründenden Forschungseinrichtungen. Der Wissenschaftsrat hatte empfohlen, rd. 13 250 Stellen in der außeruniversitären Forschung neu zu schaffen: 2 000 zur Rückführung in die Hochschulen, 11 100 für eine institutionelle Förderung in neuen außeruniversitären Forschungseinrichtungen, rd. 150 in geisteswissenschaftlichen Akademievorhaben.

Unmittelbar aufbauend auf den 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s entstanden seit Beginn des Jahres 1992 neue Einrichtungen, in denen die vom Wissenschaftsrat positiv begutachteten Wissenschaftler und Techniker ihre Forschung entweder fortsetzen oder im Rahmen neuer Programme betreiben konnten.

Bis Juli 1995 erfolgten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Wissenschaft, Forschung und Technologie 110 Neugründungen in den neuen Ländern:

- 3 Großforschungseinrichtungen (GFE) und acht GFE-Außenstellen
- 24 Blaue-Liste-Einrichtungen (BLE) und fünf Außenstellen bestehender BLE
- 22 Institute (FhI), Einrichtungen (FhE) und Außenstellen der Fraunhofer-Gesellschaft
- 11 Institute (MPI) und 27 Arbeitsgruppen der Max-Planck-Gesellschaft (MPG): eine Trägergesellschaft für die sieben geisteswissenschaftlichen Forschungsschwerpunkte; eine MPI-Außenstelle; ein Teilinstitut.

Bei den neuen Forschungseinrichtungen (Einrichtungen in gemeinsamer Bund-Länder-Finanzierung gemäß Artikel 91 b GG, Bundeseinrichtungen mit

Forschungs- und Entwicklungsaufgaben sowie Einrichtungen in Landesträgerschaft) wurden insgesamt rd. 13 000 Arbeitsplätze in der Forschung geschaffen. Hinzu kommt die Förderung von 1 528 Personen im Rahmen des Wissenschaftler-Integrations-Programms, die für die an Hochschulen und andere Einrichtungen Übernommenen bis 1996 fortgesetzt wird (insgesamt 600 Mio. DM). Von den in den neuen Forschungseinrichtungen Beschäftigten kommen ca. 92 % aus den neuen Ländern, die meisten aus dem ehemaligen Akademiesektor.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wurden in den Jahren 1991 und 1992 in den neuen Ländern eine Bundesforschungsanstalt sowie zwölf Institute und sieben Außenstellen mit 821 Planstellen/Stellen sowie 60 Stellen für Auszubildende gegründet. Diese Einrichtungen nehmen Aufgaben der Ressortforschung wahr.

Darüber hinaus sind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fünf Blaue-Liste-Einrichtungen mit sieben Außenstellen und 755 Arbeitsplätzen gegründet worden.

Die Bundesregierung hat durch ein besonderes finanzielles Engagement sowohl in der Projekt- als auch in de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die Grundlagen für eine moderne wissenschaftlich-technische Infrastruktur geschaffen. Dies kommt beispielhaft in folgenden Zahlen zum Ausdruck:

#### Ausgaben des BMBF für die neuen Länder

insgesamt 1991 bis 1994	10,8 Mrd. DM
davon	
– bisheriges Bundesministerium für Forschung und Technologie 1991 bis 1994	5,8 Mrd. DM
– bisheriges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1 bis 1994	5,0 Mrd. DM
– im Jahr 1995 insgesamt	3,2 Mrd. DM.

Quelle: BMBF

Im Ergebnis der Anstrengungen ist die personelle und apparative Ausstattung der Einrichtungen in den neuen Ländern auf einem Niveau, das dem der alten Länder weitgehend entspricht. Hinzu kommt, daß die Institute aktiv und erfolgreich Drittmittel einwerben und so ihre Forschungskapazitäten vergrößern. Heute erweist sich die außeruniversitäre Forschung als stabiler und aktiver Kernbereich der Wissenschaft in den neuen Ländern. Die neuen Einrichtungen sind national und international konkurrenzfähig; ihre Stärken haben sie insbesondere in der anwendungsorientierten Forschung und in der Vorsorgeforschung. An vielen Standorten arbeiten die Institute mit forschenden Firmen und Hochschulen zusammen.

Ungeachtet der erzielten Erfolge bleibt für die kommenden Jahre das Ziel der Bundesregierung, die Wissenschafts- und Forschungslandschaft fachlich und fi-

nanziell auf hohem Niveau zu konsolidieren. Noch vorhandene Defizite – vor allem bei der Bausubstanz – müssen dabei abgebaut und Unausgewogenheiten beispielsweise bei der regionalen Verteilung der Forschungseinrichtungen soweit möglich schrittweise ausgeglichen werden.





문서 번호 47

독일의 고용 및 자격심사 기관

1996 년 1 월

담당자 / 기관: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노동 연방연구회

내용:

이 문서는 독일노동실무협회가 발간하고 엘렌 루트 슈나이더가 작성한 보고서로 통일 전후 고용지원기관의 발전과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정치, 경제 체제 붕괴로 인해 현재 독일에는 420 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며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조화된 실업으로 빚어지는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 년 간 일련의 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실업 그리고 특히 장기실업의 위협을 받으며 시달리는 개인 및 노동시장 정책의 기타 목표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을 사회 그리고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용, 직능개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지원기관 - 임무 및 활동

고용지원기관이라는 명칭은 자율적으로 운영주체 또는 /그리고 법적으로 독립적인 공법 또는 사법 법인으로서

- 사회복지지원 및 노동시장 관련 활동을 통하여 실업자의 사회적응에 기여하며,
- 국가가 지원하는 계약직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때 또한
- 구조정책적 임무를 인지하며
- 그리고/ 또는 직능개발 및 직업중개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기업, 회사, 이니시어티브, 프로젝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지원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포함된다:

- 지금까지 주로 서독지역에서 고용지원 및 직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기업 및 이니시어티브.
- 사회복지적 통합을 위한 노력과 창업지원을 연결하여 세워진 사회적 기업과 고용진흥기업. -
- 신연방지역에서 활동 중인 고용지원회사와 고용 및 구조개발회사

## 기본 여건:

1995 년 실업인구는 400 만 명에 달하였다. 구동독지역 및 구서독지역에서는 장기실업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고착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구서독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직능부족을 보이는 중장년층, 그러나 또한 건강상 제한을 받고 중증 장애를 지닌 자 그리고 이와 동등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장기실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구동독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정책에 있어 특히 장애가 되고 있다. 실업 감소, 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기능성 향상을 위하여 독일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고용지원법(Arbeitsförderungsgesetz, AFG), 연방사회복지법(Bundessozialhilfegesetz, BSHG)과 같은 급부법(Leistungsgesetz)에 따른 고용지원수단, 유럽연합의 지원프로그램, 연방 및 주의 지원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 현재 상황:

독일노동실무협회는 고용지원기관들의 전국적인 연합기구이다. 1994 년 현재 이 협의회에 가입회원기관(1994 년 현재 약 80 개 회원조직에서 15,000 여 명이 활동 중)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고용지원 및 직능개발원의 업무에 대한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고용지원기관들은 현재 사회복지정책상의 통합기능, 구조정책상의 생산기능 및 고용을 보장하는 노동시장기능을 맡고 있다.

출처: BAG Arbeit e.V.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in Deutschland**

**Soziale Unternehmen in Europa: Länderbericht Deutschland**

Dieser Bericht wurde im Rahmen eines von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geförderten Projektes  
zur Schaffung eines europäischen Netzwerkes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erstellt.

Berlin, im Januar 1996

Verfasser:  
Ellen-Ruth Schneider, BAG Arbeit  
in Zusammenarbeit mit  
Prof. Dr. Michael Bolle, Freie Universität Berlin

## 0. EINFÜHRUNG

Nie zuvor hatten in Deutschland die zum Zweck der Arbeits- und Beschäftigungsförderung gegründeten Unternehmen, Projekte und Initiativen eine solche Bedeutung wie heute. Unter den Bedingungen einer anhaltenden Wachstumsschwäche und der Struktur- und Anpassungskrise in Ostdeutschland als Folge des Zusammenbruchs des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in der DDR, gibt 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wärtig 4,2 Mio. Arbeitslose mit einem wachsenden Prozentsatz an Langzeitarbeitslosigkeit.

Um die Folgen der strukturierten Arbeitslosigkeit zu mildern, haben sich in den vergangenen 20 Jahren eine Reihe von Einrichtungen herausgebildet, die unter verschiedenen Bezeichnungen firmieren, aber eine gemeinsame Zielsetzung verfolgen: Es handelt sich um Unternehmen, die von Arbeitslosigkeit und im besonderen von Langzeitarbeitslosigkeit bedrohten und betroffenen Personen und auch anderen Zielgruppen der Arbeitsmarktpolitik Beschäftigung, Qualifizierung und soziale Betreuung mit dem Ziel anbieten, diese Personen in die Gesellschaft und den Arbeitsmarkt einzugliedern. Um dieses Ziel zu erreichen, orientieren sich diese Gesellschaften mit ihren Arbeitsangeboten weitgehend an den Bedingungen der normalen arbeitsweltlichen Realität. Es handelt sich um Unternehmen, die ihre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am Markt anbieten und neben ihrer sozialen auch eine ökonomische Zielsetzung verfolgen.

In Deutschland gibt es für diese Unternehmen keine einheitliche Begrifflichkeit. Wie weiter unten zu zeigen sein wird, hängt diese Begriffsvielfalt mit den unterschiedlichen sozialen und politischen Milieus zusammen, aus denen diese Strukturen entstanden sind sowie mit der durch das föderalistische System bedingten länderspezifischen Förderpolitik. Diese Unternehmen bezeichnen sich beispielsweise als Soziale Unternehmen, soziale Wirtschaftsbetriebe, Sozialbetriebe, Beschäftigungsprojekte oder -initiativen, Beschäftigungs- Qualifizierungs- und Vermittlungsgesellschaften (BQG),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ABS-Gesellschaften), Arbeitsförderungsbetriebe, Integrationsbetriebe, um nur die gängigsten Namen zu nennen.

In dem weitreichenden System der aktiven und passiven Arbeitsmarkt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pielen diese Träger von Angeboten zur Beschäftigung und Qualifizierung sowie von Maßnahmen zur beruflichen Orientierung und Vermittlung eine bedeutende Rolle.

## 1. URSPRÜNGE

Der spezifischen Situation Deutschland seit 1989 Rechnung tragend, muß man mindestens zwei Entwicklungslinien - eine für West- und eine für Ostdeutschland - unterscheiden.

### 1.1.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r der Wiedervereinigung

Die ersten westdeutschen Beschäftigungsprojekte entstanden Mitte der 70er Jahre im Rahmen der "Initiativenbewegung" vor dem Hintergrund der bedrohlich ansteigenden Arbeitslosigkeit. Dabei lassen sich *alternativ-ökonomische Initiativen* und *soziale Bildungs- und Beschäftigungsinitiativen* unterscheiden.

Bei den *alternativ-ökonomischen Initiativen* des selbstverwalteten Sektors, die auch als die "neuen Selbständigen" bezeichnet werden, handelt es sich um selbstverwaltete Organisationen mit dem gesellschaftspolitischen Anspruch "durch selbstorganisierte Formen des Arbeitens und Zusammenlebens gesellschaftliche Veränderungen unmittelbar praktisch zu machen".

Die Zielsetzung der *sozial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initiativen* orientiert sich dagegen an der arbeitsweltlichen Realität und begreift die Verbesserung der Lebens- und Arbeitsperspektive ihrer Beschäftigten als Aufgabe im Rahmen erprobter Organisationsformen.

Eine lange Tradition haben auch jene Unternehmen, Betriebe und Projekte, die im Zusammenhang mit der *Armutsfürsorge und Wohlfahrtspflege* entstanden sind. Bereits nach dem ersten Weltkrieg waren zeitlich befristete Notstandsarbeiten für die Kriegsheimkehrer zu einem wesentlichen Bestandteil produktiver Erwerbslosenfürsorge geworden, die durch Zahlung einer Unterstützung das Existenzminimum absichern sollte.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wurde dann die Pflichtarbeit in der Erwerbslosenfürsorge verankert.

Als in der Bundesrepublik Ende der siebziger Jahre Projekte im Rahmen der öffentlichen und freien Wohlfahrtspflege auf der Grundlage der Sozialhilfegesetzgebung (BSHG) entwickelt wurden, standen deren Arbeitsangebote zunächst im Kreuzfeuer heftiger Kritik, da sich viele an die straforientierte Arbeitsethik der Fürsorgepolitik der Weimarer Republik erinnert fühlten. In den 80er Jahren wurden dann in den alt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Projekte, Initiativen und Betriebe, die den beschäftigungspolitischen Wert und den individuellen Hilfeansatz (Hilfe zur Arbeit) in den Mittelpunkt ihrer Arbeit setzten, besonders bedeutsam: Die weiter steigende Arbeitslosigkeit führte zu einer wachsenden Zahl Arbeitsloser, die als Ersatz oder als Ergänzung der Lohnersatzleistungen der passiven Arbeitsmarktpolitik Unterstützungen durch "Hilfe zum Lebensunterhalt" (HLU) der Sozialhilfegesetzgebung (BSHG) benötigten. Auch für die Kommunen als Trägerinnen der Sozialhilfe stieg damit die Notwendigkeit, für die Reintegration dieser Personen in den Arbeitsmarkt zu sorgen.

Dieser verschiedenen und aus unterschiedlichen Traditionen entstandenen Einrichtungen führen überwiegend gemeinnützige, im öffentlichen Interesse liegende Arbeiten in sozial und ökologisch angebotenen oder orientierten Bereichen wie Soziale Dienste, Umweltschutz, Recycling und Wohnumfeldverbesserungen durch. In der Trägerschaft von Kirchen und Einrichtungen der Wohlfahrtspflege, aber auch in freier Trägerschaft und unter Mitwirkung von Kommunen entstanden so eine Vielzahl von rechtlich und/oder organisatorisch selbständigen Unternehmen, Betrieben, Projekten und Initiativen. Ihre Tätigkeit zielt auf die Verbesserung der Integrationsbedingungen von bestimmten Zielgruppen in den Arbeitsmarkt und in die Gesellschaft. Die Beschäftigten sind meist gesellschaftlich benachteiligte, als schwer vermittelbar geltende und leistungsgeminderte Arbeitslose oder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 Menschen. Die Finanzierung der Vorhaben erfolgt durch öffentliche Förderung nach den Leistungsgesetzen des Arbeitsförderungs-, Jugend- und Sozialhilferechtes oder durch zielgruppenspezifische Maßnahm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Aufgrund des Engagements und meist auch in der Trägerschaft von Verbänden der freien Wohlfahrtspflege (Caritas, Diakonisches Werk, Deutscher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Arbeiterwohlfahrt), der Kirchen, der Kommunen und freier Träger wurden soziale Unternehmen und Betriebe gegründet, die das Instrument des BSHG "Hilfe zur Arbeit" intensiv nutzen und mit ihren Beschäftigungsangeboten der Ausgliederung von dauer- und langzeitarbeitslosen Personen aus dem Arbeitsmarkt entgegenwirken.

## 1.2. Neue Beschäftigungsträger im vereinigten Deutschland

Nach dem politischen Ende der DDR und der Vereinigung haben sich auf dem Territorium der ehemaligen DDR entscheidende Umbrüche sowohl im politischen als auch im ökonomischen System vollzogen. Auf den Arbeitsmärkten äußerten sich diese Prozesse mit besonderer Dramatik. Während in der ehemaligen DDR offene Arbeitslosigkeit nicht vorkam, brach die Beschäftigung seit 1990 förmlich ein. Die geringe Wettbewerbsfähigkeit der ostdeutschen Wirtschaft wurde bei einem ihren erheblichen Produktivitätsrückstand nicht widerspiegelnden Wechselkurs nach der Währungsreform sofort deutlich. Die ostdeutsche Industrie erwies sich so weder nach innen - auf die Binnenmärkte - noch nach außen - auf die Weltmärkte - als auch nur annähernd tragfähig genug, den erreichten Beschäftigungsstand zu sichern. Die Arbeitslosenquote stie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amatisch an und betrug im Durchschnitt des Jahres 1994 16%. Überwiegend betroffen von der Arbeitslosigkeit waren Frauen und ältere Menschen.

Die massiven wirtschafts-, struktur-,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schen Interventionen - der öffentliche Finanztransfer aus Bundesmitteln in die neuen Bundesländer betrug 1995 mit netto 155 Mrd. DM 5% des westdeutschen Bruttoinlandproduktes und 40% des Bruttoinlandproduktes der neuen Bundesländer - konnten einen noch stärkeren Beschäftigungseinbruch verhindern und soziale Notlagen begrenzen. Gleichzeitig wurden für viele Menschen Brücken für die Reintegration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geschaffen. Eine bedeutende Rolle spielten dabei die ABS-Gesellschaften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die nach der Vereinigung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und Berlin gegründet wurden. Es handelt sich dabei um spezielle, rechtlich selbständige und auf die Arbeitsförderung spezialisierte Träger in der Rechtsform juristischer Personen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s, die in unmittelbarem Zusammenhang mit der Schließung und dem Personalabbau von den ehemaligen Volkseigenen Betriebe und Kombinate der DDR gegründet wurden und den Beschäftigten die Chance bieten sollten, zunächst von Arbeitslosigkeit verschont zu bleiben. Neben ihrer arbeitsmarktpolitischen Bedeutung kommt den ABS-Gesellschaften vor allem eine strukturpolitische Bedeutung zu. Sie spielt im Selbstverständnis der ABS Gesellschaften eine erhebliche Rolle und bezieht sich auf die Wahrnehmung regionaler und lokaler Sanierungs-, Wiederaufbau- und Entwicklungsaufgaben.

## 2. ENTWICKLUNGEN BIS HEUTE

### 2.1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 Aufgaben und Tätigkeit

Vor dem Hintergrund der dargestellten Entwicklung sind mittlerweile eine Vielzahl unterschiedlicher Organisationen mit gemeinsamer oder ähnlicher Zielsetzung entstanden, die in diesem Bericht als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 bezeichnet werden.

Der Begriff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bezieht sich auf Unternehmen, Betriebe, Initiativen und Projekte, die organisatorisch eigenständig in Trägerschaft oder/und als rechtlich selbständige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oder privaten Rechtes

- ♦ durch sozialbegleitende und arbeitsmarktrelevante Aktivitäten zur Eingliederung von arbeitslosen Menschen beitragen, indem sie
- ♦ öffentlich geförderte und befristete Arbeitsplätze anbieten, dabei auch
- ♦ strukturpolitische Aufgaben wahrnehmen

- ♦ und/oder Maßnahmen zur beruflichen Qualifizierung und zur Arbeitsvermittlung durchführen.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mfassen

- ♦ die bis heute noch überwiegend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ertretenen und hier als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bezeichneten Unternehmen und Initiativen, die vorrangig arbeitsmarktpolitische Aufgaben und sozialpolitische Ziele zu verwirklichen suchen, sowie die zu dieser Gruppe zu zählenden
  - ♦ Soziale Betriebe und Arbeitsförderbetriebe, die sozialpolitische Integrationsbemühungen mit Existenzgründungen verbinden und bei degressiver Förderung nach einer gewissen Zeit 'am Markt' etabliert sein sollen; Sozialunternehmen, die auch auf geschützten Teilarbeitsmärkten arbeiten und teilweise dauersubventionierte Arbeitsplätze anbieten; eine Fülle von Initiativen im alternativen Bereich und der Arbeitslosenselbsthilfen, die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anbieten und
  - ♦ d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tätigen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ABS Gesellschaften), die überwiegend arbeitsmarktpolitische Ziele mit strukturpolitischen Aufgaben zu verbinden suchen.

###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BQG)*

Die in der Tradition der Bewältigung von Arbeitslosigkeit und Armut der alten Bundesländer entstandenen BQGs haben eine außerordentliche hohe Bedeutung. Sie werden unter den unterschiedlichsten Bezeichnungen tätig und nehmen als Träger befristeter, öffentlich finanzierter Maßnahmen zur Betreuung und Qualifizierung (manchmal auch zur Vermittlung) von Beschäftigten eine Brückenfunktion zur möglichst raschen Integration der Zielgruppen der Arbeitsmarktpolitik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ein.

Die Beschäftigten werden in betriebliche Strukturen eingebunden, die denen regulärer Märkte nahe kommen. So soll eine möglichst realitätsgerechte Ausgestaltung der Arbeitsplätze gewährleistet werden. Die Beschäftigung ist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und entspricht in ihren Arbeits- und Entlohnungsbedingungen den arbeitsrechtlichen und tariflichen Vorgaben. Di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sind jedoch bis auf wenige Ausnahmen befristeter Art.

Die Tätigkeit der BQGs wird durch öffentliche Förderung finanziell gestützt. Dies erfolgt meist in Form von befristeten Zuschüssen zu den Löhnen und Gehältern der Beschäftigten.

Die Förderung erfolgt weit überwiegend im Wege der Individualförderung und ist damit an besondere Merkmale der Teilnehmer an den arbeitsmarktpolitischen Maßnahmen gebunden. Es handelt sich meist um Arbeitslose mit einer Reihe von Risikomerkmalen, die in der Regel für Langzeitarbeitslose zutreffen. Jugendliche ohne Ausbildung, Menschen mit gesundheitlichen Beeinträchtigungen, sei es psychischer oder physischer Art, Menschen mit diskontinuierlichen Erwerbsverläufen, Nichtseßhafte und ehemalige Straffällige. Da es um die Beschäftigung von Arbeitslosen mit dem Ziel der Integration geht, stellt das Arbeitsverhältnis eine Verbindung von Arbeiten und Qualifizierung dar. Mit der Beschäftigung eines Arbeitslosen entstehen für die BQGs damit ausgeprägte Qualifizierungs-, Betreuungs- und Beratungsaufgaben.

Die meisten BQGs sind rechtlich selbständig, aber häufig den Trägern der öffentlichen (Städte, Landkreise) und freien Wohlfahrtspflege (u.a. Caritas, Diakonisches Werk, Deutscher Paritätischer Wohlfahrtsverband) angeschlossen. Viele von ihnen existieren bereits seit mehr als zehn Jahren und verstehen sich als reguläre Unternehmen. Die Rechtsform ist meist die einer GmbH oder die des eingetragenen Vereins. Die steuerliche Gemeinnützigkeit ist kein zwingendes Merkmal, aber zur optimalen Nutzung der oft diesen Status voraussetzenden öffentlichen För-

derung notwendig. Neben den rechtlich selbständigen Unternehmen gibt es eine Fülle von organisatorisch eigenständigen Betrieben, Projekten und Initiativen in verschiedener Trägerschaft.

Einige Organisationsformen sollen beispielhaft genannt werden. Einige *Sozialbetriebe*, so die kommunalen Beschäftigungsbetriebe, sind vor allem für öffentliche Auftraggeber tätig und bieten ökologisch und sozial wichtige Dienstleistungen und Produkte an, die von leistungsgeminderten Zielgruppen erbracht werden und zu speziell vereinbarten Bedingungen von dem Auftraggeber abgenommen werden. Andere *soziale Betriebe* sind als Zweckbetriebe aus dem gemeinnützigen Tätigkeitsfeld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mit dem Ziel ausgegrenzt worden, dem Träger die Orientierung auf dem Angebotsmarkt zu erleichtern und die Akzeptanz bei den Konkurrenzfirmen zu verbessern. Die *Arbeitsförderbetriebe* oder *Sozialbetriebe* sind als besonderes Modell der Existenzgründung mit Problemgruppen des Arbeitsmarktes konzipiert. Die Stammitarbeiter sind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unbefristet beschäftigt, die Betriebe erhalten in einer 3-5jährigen Startphase einen zumeist degressiven Betriebskostenzuschuß und sollen sich nach Ablauf dieser Startphase am Markt ohne weitere öffentliche Unterstützung unabhängig bewegen.

Es ist schwierig, die Verbreitung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in ihren verschiedenen Organisations- und Rechtsformen und die Zahl ihrer Beschäftigten zu bestimmen. Für das Jahr 1990 und das Gebiet der alten Bundesrepublik werden 140 BQGs mit 9.000 Beschäftigten genannt (Lindner), Zahlen, die aufgrund der Unterschätzung der Bedeutung der vielen Initiativen, Projekte und Betrieben zu niedrig erscheinen. Eine andere Untersuchung (Kaiser) schätzt Dichteziffern für das Jahr 1986 (Zahl der BQGs auf Hunderttausend Einwohner/Erwerbspersonen; Zahl der Beschäftigten auf Hunderttausend Einwohner/ Erwerbspersone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Dichteziffern (Kaiser) wurden für diesen Bericht Schätzungen vorgenommen (Bolle), da andere seriöse empirische Arbeiten zur quantitativen Bedeutung der BQGs nicht vorliegen. Danach würde für das Jahre 1994 die Anzahl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Unternehmen, Betriebe, Projekte und Initiativen) für das gesamte Bundesgebiet bei 4.000 (plus/minus 10 Prozent) bei einer Beschäftigtenzahl bei 86.000 (plus/minus 10 Prozent) liegen.

####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ABS)*

Die ABS Gesellschaften weisen in vieler Hinsicht Ähnlichkeiten mit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auf. Sie unterscheiden sich allerdings (noch) von den BQGs durch eine stärkere strukturpolitische Einbindung und geringere sozialpolitische Orientierung.

Der Entstehungshintergrund und die dominierende Rechtsform der GmbH zeigen das besondere Engagement verschiedener Institutionen. Die nach der Vereinigung gegründete Treuhandanstalt (THA) hatte die Aufgabe, als Eigentümerin der ehemaligen Volkseigenen Betriebe diese in Privateigentum zu überführen. Die im Juli 1991 abgeschlossene Rahmenvereinbarung zwischen THA, Gewerkschaften, Arbeitgeberverbänden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zur Gründung von ABS-Gesellschaften erklärt denn auch die betrieblichen Wurzeln der ABS Gesellschaften, die heute aufgrund des Engagements der Gebietskörperschaften und gemischter Träger immer mehr zu regional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werden.

Bereits kurz nach Abschluß der Rahmenvereinbarung zur Bildung von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hatte die Beschäftigung in den ABS-Gesellschaften bedeutende Ausmaße angenommen. Ende 1991 bestanden 333 ABS-Gesellschaften, Anfang 1995 waren es 391. Die Beschäftigtenanzahl betrug 155.048. 90% aller Be-



schäftigten wurden dabei durch arbeitsmarktpolitische Maß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gefördert.

In der Zeit zwischen 1991 und 1994 wurde lohnsubventionierte Beschäft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großem Umfang von den ABS-Gesellschaften abgewickelt.

Die Beschäftigung im Rahmen der lohnsubventionierten Arbeitsförderung stieg in Ostdeutschland im Jahre 1991 von etwas über 300.000 Beschäftigte auf knapp 400.000 Beschäftigte (Anfang 1992) an. Entsprechend erhöhte sich auch der Anteil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ten in ABS Gesellschaften an der Gesamtheit der lohnsubventionierten Beschäftigung von knapp 10% auf etwa 15%. Während die lohnsubventionierte Arbeitsförderung im Jahre 1994 wieder auf etwa 250 000 Beschäftigte zurückging stieg der Anteil der ABS-Beschäftigung an der Gesamtbeschäftigung der Arbeitsförderung 1994 weiter auf rund 50% an. Die ABS waren damit bis heute die wesentlichen Träger der Arbeitsmarktpoliti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 Größenordnungen solcher Gesellschaften sind beeindruckend. Nicht selten entwickelten sich Gesellschaften mit bis zu 5000 Beschäftigten und bis zu 40 verschiedenen Projekten zum größten Arbeitgeber einer Region. Dies macht denn auch die erhebliche strukturpolitische Bedeutung der ABS Gesellschaften deutlich.

Die Anfang 199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offen werdende Notwendigkeit einer Sanierung und Entwicklung der Infrastruktur und der Beseitigung von Umweltschäden ließ gerade auch bei der engen Anbindung an sich auflösende ehemalige Großkombinate eine regionale und strukturelle Orientierung von ABS Gesellschaften an diesen Aufgabengebieten vernünftig erscheinen.

## **2.2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zweiter Arbeitsmarkt**

Die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auf der einen und die ABS Gesellschaften auf der anderen Seite machen einen Großteil der den 'Zweiten Arbeitsmarkt' konstituierenden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aus. In diesem neuen "Markt" werden Arbeiten durchgeführt, die "zusätzlich und gemeinnützig" sind und die, da sie nicht zu den Pflichtaufgaben des Staates gehören, sonst nicht durchgeführt würden. Typische Tätigkeitsfelder sind soziale und kulturelle Dienste, Landschafts- und Umweltschutz, Verbesserungen des Wohnumfelds und arbeitsintensive handwerkliche Reparaturarbeiten.

Der zweite Arbeitsmarkt ist durch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Programme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Kommunen und der Europäischen Union öffentlich gefördert.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bündeln diese unterschiedlichen Subventionen zur Finanzierung ihres Angebotes an Beschäftigung, Qualifizierung, sozialer Betreuung und Vermittlung sowie der von ihnen produzierten Güter- und Dienstleistungen. Für BQGs ist dabei die Brückenfunktion für am Arbeitsmarkt benachteiligte Personen mit dem Ziel der Reintegration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ABS-Gesellschaften stand bisher jedenfalls die strukturpolitische Funktion im Vordergrund. Beiden Unternehmenstypen ist die arbeitsmarktpolitische Entlastungsfunktion gemeinsam.

Die Bedeutung der ABS Gesellschaften als Träger der lohnsubventionierten Beschäftigung wurde bereits betont: 50 % der in der Arbeitsförderung der neuen Bundesländer Beschäftigten arbeiteten in ABS Gesellschaften (Brinkmann). Für die BQGs ist dieser Anteil nur schwer zu bestimmen. Angesichts der beschäftigungsschaffenden Maß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der Landesprogramme und der EU (ANBA, 1995) sowie der erheblichen Dimension der

über das BSHG finanzierten Arbeitsplätze, die hier auf der Grundlage von Kennziffern (Lüsebrink) auf etwa 30.000 Personen geschätzt wird (Bolle), kann von einer Größenordnung um 70% des Anteils der in den BQGs Beschäftigten an der öffentlichen Arbeitsförder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usgegangen werden (Bolle).

Für die BQGs und die ABS-Gesellschaften bedeutet dies zusammen einen Beschäftigungsanteil von über 56%, den sie für den Zweiten Arbeitsmarkt in der Bundesrepublik leisten (Bolle).

### **3. RAHMENBEDINGUNGEN**

#### **3.1. Arbeitslosigkeit und Arbeitsmarktpolitik**

1995 erreichte die Arbeitslosigkeit die vier Millionen Marke und es ist damit zu rechnen, daß die Zahl der Arbeitslosen bis in das Jahr 2000 weiter steigen wird. Dabei beschönigt die offizielle Statistik die Zahlen. Seriöse Schätzungen rechnen damit, daß die 'versteckte Arbeitslosigkeit' bereits 1995 noch einmal zwei Millionen Menschen ausmacht.

Das Niveau der Arbeitslosigkeit ist beängstigend. Dennoch ist dies nicht das ganze Problem. Arbeitslosigkeit gewinnt dann besondere Dramatik, wenn sie sich strukturiert. Eben dies ist in der Bundesrepublik der Fall. Besonders augenfällig wird die zunehmende Strukturierung an dem außerordentlich hohen Anteil der Frauenerwerb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dem besonders hohen Anteil der gering qualifizierten und älteren Arbeitskräften an den Arbeitslos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st gleichzeitig eine deutliche Tendenz zur Verfestigung der Arbeitslosigkeit durch den dramatischen Anstieg der Langzeitarbeitslosigkeit festzustell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ind es vor allem Ältere, Personen mit geringen Qualifikationen vor allem aber Menschen mit gesundheitlichen Einschränkungen und Schwerbehinderte sowie ihnen gleichgestellte Personen, die Langzeitarbeitslosigkeit wesentlich bestim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dieser Strukturierungsprozeß bisher nicht so weit wie in den anderen Bundesländern fortgeschritten. Es fällt jedoch auf, daß hier vor allen Dingen Frauen langzeitarbeitslos sind.

Dieser 'harte Kern' der Arbeitslosen stellt Arbeitsmarktpolitik vor besondere Herausforderungen. Dabei ist zu bedenken, daß die Arbeitsmarkt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außerordentlich weit entwickelt ist. Dies gilt nicht nur für die passive Arbeitsmarktpolitik, die im Wege von Lohnersatzleistungen die im Zuge von Arbeitslosigkeit auftretenden finanziellen Probleme mindern hilft, sondern auch für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ls wertlicher Trägerin der Arbeitsmarktpolitik.

Die Quantität der Ausgaben für aktive Arbeitsmarktpolitik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ind in der Tat beeindruckend (ca. DM 38.Mrd im Jahre 1994), die Inanspruchnahme der Maßnahmen und die Entlastungswirkungen für den Arbeitsmarkt zeigen die Erfolge. Alleine aufgrund der beschäftigungschaffenden Maß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war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m Jahre 1995 rund 104.000 Menschen nicht arbeitslo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aren es sogar 385.000 Menschen.

Für die Senkung der Arbeitslosigkeit, die Förderung der Beschäftigung und die Verbesserung der Funktionsfähigkeit der Arbeitsmärkte stehen in der Bundesrepublik eine Fülle von Instrumenten zur Verfügung. Von besonderer Bedeutung sind die Instrumente der Beschäftigungs-

förderung nach den Leistungsgesetzen wie das AFG (Arbeitsförderungsgesetz) und das BSHG (Bundessozialhilfegesetz), die Förderprogramme der Europäischen Union sowie die Förderprogramme des Bundes und der Länder.

Für die Beschäftigungsförderung nach den *Leistungsgesetzen* ist das *Arbeitsförderungsgesetz (AFG)* von besonderer Bedeutung. Die Leistungen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beruhen auf individualrechtlichen Ansprüchen und sind damit von den Voraussetzungen der Erwerbspersonen abhängig. In einzelnen Fällen werden auch Träger (institutionelle Förderung) bzw. einzelne Maßnahmen von Trägern (Projektförderung) pauschal gefördert.

Die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sind auch von der Größenordnung her der bedeutendste Teil zur Finanzierung des 'Zweiten Arbeitsmarktes'. Es werden bevorzugt Arbeiten gefördert, die die Arbeitslosigkeit abbauen, eine dauerhafte und qualifikationsgerechte Wiedereingliederung arbeitsloser Arbeitnehmer erreichen und zur Verbesserung der sozialen Infrastruktur und zu sonstigen Strukturverbesserungen beitragen. Zur Realisierung dieser Zielsetzungen sind die ABM an bestimmte Voraussetzungen gebunden. Diese betreffen vor allem die Zusätzlichkeit der Arbeit,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Durchführung dieser Arbeiten und die arbeitsmarktpolitische Zweckmäßigkeit.

Die AB-Maßnahmen sind zeitlich befristet. Die Träger von ABM könne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es sein, gemeinnützige Unternehmen oder Einrichtungen des privaten Rechtes und sonstige Unternehmen des privaten Rechtes. Die Teilnehmer an den ABM sind Arbeitslose mit bestimmten individuellen Voraussetzungen. Sie werden durch das Arbeitsamt dem Träger zugewiesen.

Die Finanzierung von ABM geschieht in Form von Zuschüssen zu den Lohnkosten der in ABM Beschäftigten, durch verstärkte Förderung durch Bundes- und Landesmittel sowie Darlehen und Zinszuschüssen zu den Kosten der gesamten Maßnahmen. Der Zuschuß zu den Personalkosten der ABM-Teilnehmer beträgt im Normalfall zwischen fünfzig und fünfundsiebzig Prozent des tariflichen bzw. ortsüblichen Entgeltes, der Arbeitgeberanteil zur Sozialversicherung wird pauschal mitgeförder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lten zusätzliche Fördermöglichkeiten.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die ABM-Sonderform des §249 h AFG, der inzwischen ähnlich und mit eingeschränktem Geltungsbereich in Form des §242s AFG auch in den alten Bundesländern gilt. Der § 249h ist eine Form von Beschäftigungsförderung durch Lohnkostenzuschüsse fü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Umwelt, der sozialen Dienste und der Jugendhilfe.

Einige besondere Maßnahmen zur Arbeitsbeschaffung für ältere Arbeitnehmer und Zuschüsse zu deren Lohnkosten ergänzen diesen Maßnahmekatalog. Im Wege der institutionellen Förderung durch Zuschüsse und Darlehen für den Aufbau, die Erweiterung und die Ausstattung von Arbeitsplätzen für Ältere wird die Schaffung zusätzlicher Dauerarbeitsplätze bei einer angemessenen Eigenbeteiligung des gemeinnützigen Trägers gefördert. Schließlich werden *Einarbeitungszuschüsse und Eingliederungsbeihilfen* dann gewährt, wenn entweder eine verstärkte qualifizierende Einarbeitung notwendig ist oder Arbeitnehmer aufgrund von Alter, Dauer der Arbeitslosigkeit sowie durch gesundheitliche Einschränkung besonders schwervermittelbar sind.

Die bisher beschriebenen ABM- und LKZ-Maßnahmen gelten auch für Behinderte und Schwerbehinderte. Das Schwerbehindertengesetz und das AFG sehen darüber hinaus weitere Hilfe für die Eingliederung dieser Personengruppe vor.

Bei den Maßnahmen der beruflichen Bildung unterscheidet das AFG zwischen Ausbildung, Fortbildung und Umschulung. Die Förderbereiche umfassen die individuelle

Förderung, die Maßnahmeförderung als Leistung an Träger von Bildungsmaßnahmen und die institutionelle Förderung für die Errichtung von Bildungseinrichtungen. Gefördert werden freie Maßnahmen von Trägern, die Bildungsmaßnahmen auf dem Markt anbieten, aber auch Auftragsmaßnahmen, die das Arbeitsamt auf dem Wege der Vergabe von Maßnahmen bei Trägern einrichtet. Bestimmte Vorschriften regeln förderungsfähige Bildungsmaßnahmen in bezug auf Dauer, Gestaltung, Methoden und Teilnahmebedingungen.

Die Leistungen nach dem Bundessozialhilfegesetz (BSHG) machen den zweiten Schwerpunkt der Förderung der Beschäftigung nach den Leistungsgesetzen aus und sind entsprechend dem Subsidiaritätsprinzip nachrangig. Ein weiteres Grundprinzip des BSHG ist die Hilfe zur Selbsthilfe. Entsprechend diesen Grundprinzipien ist die Hilfe zur Arbeit in den §§18, 19, 20 BSHG geregelt. Die Mitwirkungspflicht des Hilfeempfängers wird dadurch bestimmt, daß ein Anspruch auf Hilfe zum Lebensunterhalt (HLU) dann nicht besteht, wenn der Adressat sich weigert, zumutbare Arbeit zu leisten.

Die Schaffung von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durch 'Hilfe zur Arbeit' (HzA) besteht in der Finanzierung gemeinnütziger und zusätzlicher Arbeit durch Abschluß eines in der Regel befristeten Arbeitsvertrages auf der Grundlage eines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Eine Alternative besteht in der Schaffung eines öffentlich-rechtlich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für gemeinnützige und zusätzliche Arbeit, wobei die 'Hilfe zum Lebensunterhalt' (HLU) und eine Mehraufwandsentschädigung gezahlt wird. Ei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s Beschäftigungsverhältnis und Leistungsansprüche nach dem AFG entstehen nicht, der HLU-Empfänger erhält weiter Sozialleistungen. In jedem Fall muß die Schaffung der Arbeitsgelegenheiten im gemeinnützigen Bereich und zusätzlich erfolgen.

Die HZA-Arbeitsverhältnisse sind hinsichtlich Dauer und Inhalten unterschiedlich ausgestaltet. Sie variieren entsprechend den von den Kommunen bevorzugten Angeboten, neuerdings werden von den Gemeinden die in §19, Abs. 2 als erste Alternative vorgesehene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en gewählt. Die Dauer der Arbeitsverträge variiert dabei zwischen fünf Monaten und drei Jahren. Die Kosten von HZA-Beschäftigung tragen die Sozialhilfeträger, in einigen Bundesländern wird HZA durch Landesprogramme zusätzlich gefördert.

Da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ergänzt die geschilderten Maßnahmen. Allerdings sind diese Ansprüche gegenüber anderen nachrangig, können aber in Kombination zur Sicherung der Gesamtfinanzierung eingesetzt werden.

A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nd die *Europäischen Strukturfonds* und hier vor allem der *Europäische Sozialfonds* von großer Bedeutung. Die Förderung der beruflichen Verwendbarkeit und Freizügigkeit der Arbeitskräfte innerhalb der Gemeinschaft geschieht über die Beschäftigungsförderung anspruchsberechtigter Personen (arbeitslose und von Arbeitslosigkeit bedrohte Personen, Jugendliche bis zu fünfundzwanzig Jahre, Langzeitarbeitslose sowie Beschäftigte aus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in denen neue Produktionsverfahren eingeführt werden). Gefördert werden Maßnahmen zur Berufsbildung, Beihilfen für Beschäftigung und Existenzgründung sowie sonstige Maßnahmen. Die Beteiligung des Fonds an beruflichen Bildungsmaßnahmen unterliegt dem Prinzip der Additionalität und Komplementarität. Als Komplementärmittel gelten auch die Leistungsgesetze.

Zu erwähnen sind schließlich die *Programme des Bundes und der Länder für Langzeitarbeitslose* (Beschäftigungshilfen für Langzeitarbeitslose, Maßnahmen für besonders beeinträchtigte Langzeitarbeitslose und schwerstvermittelbare Arbeitslose

(250/490 Millionen-Programm, Sondermittel für die Durchführung von Modellvorhaben zur Wiedereingliederung besonders schwer vermittelbarer Langzeitarbeitsloser), mit denen im Wege der individuellen, institutionellen und Projektförderung Personalkosten, Betriebskosten und Investitionen anteilig mit dem Ziel der Schaffung von befristeten und Dauerarbeitsplätzen auch durch experimentelle Modellvorhaben übernommen werden. Spezielle Landesprogramme, deren Ausgestaltung und Größe variieren, zielen auf die Integration von am Arbeitsmarkt benachteiligten Arbeitskräftegruppen durch Bereitstellung einer Anschubfinanzierung. Betriebe, die diese Anschubfinanzierung für sich in Anspruch nehmen wollen, werden als 'soziale Betriebe' die Integration von Problemgruppen des Arbeitsmarktes und die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für die Zielgruppen leisten müssen. In der Regel geht es um die Integration von Langzeitarbeitslosen, die Anschubfinanzierung wird für einen begrenzten Zeitraum zur Verfügung gestellt. Gelingt die Marktorientierung, ist eine Weiterförderung möglich. Gelingt dies nicht, wird die Förderung eingestellt.

### 3.2 Der zweite Arbeitsmarkt

Die Vielfalt des zur Verfügung stehenden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ariums ist in der Tat beeindruckend. Der Einsatz dieser Instrumente hat denn auch entscheidend dazu beigetragen, stärkere Beschäftigungseinbrüche zu verhindern.

Die Qualität der Arbeitsmarktpolitik entscheidet sich indes nicht allein durch die Zahl der geförderten Personen, sondern auch darüber, in welchem Ausmaß die Wiedereingliederung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gelingt. Auch hier sind die Ergebnisse durchaus erfreulich

Angesichts dieser Erfolge ist es nicht überraschend, wenn immer wieder darauf verwiesen wird, daß viele arbeitsmarktpolitische Maßnahmen finanziell eher günstig sind und sich in besonderem Maß selbst tragen. Dies gilt vor allem für die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Die ABM finanzieren sich durch eingesparte Lohnersatzleistungen und durch zusätzliche Einnahmen aus Steuern sowie Sozialversicherungsbeiträgen zu 60% bis 70% selbst.

Dennoch ist nicht zu übersehen, daß die finanziellen Belastungen durch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für die öffentliche Hand aufgrund der hohen Arbeitslosigkeit gerad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zwischen kaum noch zu verkraften sind. Bei den entstandenen Finanzierungslücken mußte der Beitragssatz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von 4,3% auf 6,5% heraufgesetzt wurde.

Ähnliche Argumente gelten auch für die Förderung der "Hilfe zur Arbeit" nach dem BSHG. Bis 1995 sind in der öffentlichen und freien Wohlfahrtspflege durch die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Variante des BSHG rund 80.000 Arbeitsplätze entstanden (Böhringer). Andere Arbeiten (Lüsebrink) nennen die Zahl von rund 11.300 Personen (1989), die stichtagsbezogen in der Entgeltvariante beschäftigt waren. In der Mehraufwandsvariante waren es deutlich weniger mit abnehmender Tendenz, für 1985 etwa 14.000 und für 1989 etwa 7.800 Sozialhilfeempfänger.

Auch bei der Hilfe zur Arbeit sind die Selbstfinanzierungsquoten für die Kommunen hoch. Die Kosten der Vorhaben haben sich nach 1,5 - 3,0 Jahren nach Maßnahmeende für die Kommune durch entfallende Ausgaben für die Hilfe zum Lebensunterhalt und Mehreinnahmen amortisiert (Lüsebrink). Die gesamtfiskalische Entlastung ist jedoch zweifelhaft, da nach Maßnahmeende oft erneute Arbeitslosigkeit folgt.

Das besondere Problem der "Hilfe zur Arbeit" durch das BSHG besteht heute darin, daß die HLU-Abhängigkeit unter den Erwerbslosen kontinuierlich anstieg und weiter ansteigt. Die häufigste Ursache für langfristigen und ununterbrochenen HLU-Bezug ist auch heute die Arbeitslosigkeit. Die Belastung für die Gemeindehaushalte wird damit immer stärker. Da die 'Mehraufwandsvariante', in der die Teilnehmerinnen im HLU-Bezug lediglich eine Entschädigung für Mehraufwendungen erhalten und ein Arbeitsverhältnis im Sinne des Arbeitsrechts nicht entsteht, nur in geringem Maße Chancen zum Übergang in reguläre Arbeitsverhältnisse bietet, haben die Sozialhilfeträger Ende der 80er Jahre verstärkt Arbeitsplätze nach der Entgeltvariante des §19 BSHG angeboten.

Bei steigenden Ausgaben und sinkenden Einnahmen des Bundes aufgrund geringer Wachstumsraten des Bruttoinlandproduktes wird die Finanzierung des öffentlichen Haushaltes und eine Eindämmung der Nettoneuverschuldung, die auch im Zusammenhang mit den Maastricht getroffenen Vereinbarungen steht, immer schwieriger. Zusätzliche Steuern wie der Solidaritätszuschlag und Einschränkungen von Transfereinkommen und Subventionen machen daher auch Wirtschafts- und Finanz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aus. Dieser 'Zwang zum Sparen' führt denn auch zu Einschränkungen der Leistungen für die passive und aktive Arbeitsmarktpolitik und damit der Förderbedingungen und des Fördervolumens der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wichtigen Maßnahmen. Eben dies macht die gegenwärtige Situation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us: Der Versuch, sich in einer Phase der deutlichen Konsolidier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mit entsprechenden Wirkungen auf Volumen und Förderkonditionen der verschiedenen zur Finanzierung der Vorhaben zur Verfügung stehenden Instrumenten zu stabilisieren und neue Finanzierungsmöglichkeiten auch über die Märkte zu suchen.

#### 4. DIE SITUATION HEUTE: EINE BESTANDSAUFNAHME

Die strukturellen Bedingungen für die Arbeit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lassen sich qualitativ und quantitativ fassen. Die quantitativen Angaben folgen bekannten empirischen Untersuchungen (Lindner) und werden mit den Erhebungen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BAG) Arbeit verglichen. Die BAG Arbeit ist die bundesweite Dachorganisation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eutschland. Sie hat 1994 in einer Eigenerhebung bei ihren Mitgliedern (ca. 80 Mitgliedsorganisationen mit rund 15.000 Beschäftigten in 1994) die strukturellen Bedingungen für die Arbeit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erhoben.

Zur *Finanzierung* sind die BQGs auf die öffentliche Förderung angewiesen. Die steuerliche Gemeinnützigkeit ist dabei zur optimalen Nutzung der Fördermaßnahmen notwendig. Die Finanzierung über den Markt ist in d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von geringerer Bedeutung. Obwohl einige Unternehmen Eigenerlöse erwirtschaften (45%; BAG Arbeit), sind die Größenordnungen nicht erheblich. Nur bei einem Fünftel der Unternehmen überschreitet ihr Anteil an der Gesamtfinanzierung 25%. Einig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haben zwar Selbstfinanzierungsanteile von 50% (Lindner), dennoch sind dies Ausnahmen. Von den Angeboten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verwenden die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in der Regel (90% aller Einrichtungen; BAG Arbeit) mehrere Finanzierungsquellen. Gut 60% nutzen die Instrumente des AFG, rund 44% die Möglichkeiten des Bundessozialhilfegesetzes. Die dritte große Säule ist schließlich die Förderung aus Mitteln der Europäischen Union. Ihr Anteil liegt allerdings deutlich niedriger, meist unter 10%. Das Schwergewicht der Finanzierung liegt mit 43% (Lindner) beim Nebeneinander von Hilfe zur Arbeit und ABM-Finanzierung.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bekommen oft eine Festbetragsfinanzierung oder eine Fehlbedarfsfinanzierung von den Trägern. Für Soziale Betriebe in der Trägerschaft der Organisationen der Wohlfahrtspflege und der Kirchen werden daher auch geringe Anteile an AFG- Mitteln (26% ) und BSHG-Mitteln (15%) genannt (Kaiser).

Der überwiegende Teil der *Maßnahmeteilnehmer* sind Langzeitarbeitslose (64%; BAG Arbeit). In der Regel sind die Maßnahmeteilnehmer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ohne Schul- und Berufsabschluß, viele Teilnehmer sind Personen mit besonderen sozialen Schwierigkeiten oder schwerstvermittelbare Ältere, Behinderte oder gesundheitlich beeinträchtigte Erwerbspersonen. Zunehmend sind Frauen repräsentiert (49%; BAG Arbeit), einige BQGs spezialisieren sich auf spezielle Maßnahmen für Frauen. Bei der *Maßnahmegestaltung* versuchen die BQGs möglichst viele qualifizierende Elemente zur Vermittlung von Arbeitstugenden (Pünktlichkeit, Zuverlässigkeit) und der Berufsvorbereitung, der Ausbildung in anerkannten Berufen, der Fort- und Weiterbildung sowie der Anpassungsfortbildung und Umschulung einzubauen. Dies wird durch intensive Beratung und Betreuung ergänzt. Bei der praktischen Qualifizierung kommt der fachlichen Anleitung besondere Bedeutung zu. Die Schlüssel zwischen Fachpersonal (Anleiter) und Maßnahmebeschäftigten schwanken erheblich. Sie liegen zwischen 1:10 und 1:4 bei knapp einem Drittel der Einrichtungen (BAG Arbeit). Sehr viel schlechter liegt der Schlüssel in bezug auf die sozialpädagogische Betreuung. Er liegt hier zwischen 1:24 und 1:12 (Lindner).

Die *Arbeitsplätze und Tätigkeitsfelder* sind sowohl traditioneller als auch innovatorischer Art.; Der Baubereich mit der Stadterneuerung, Wohnumfeldgestaltung, Denkmalschutz, Wohnraum- und Häusersanierung, Fassadenbegrünung und ähnliches nimmt erhebliche Anteile ein (49%; BAG Arbeit). Die Landschaftspflege und der Gartenbau sowie das Handwerk mit Metallbau, Schlosserei, Schreinerei, Tischlerei, Malerei, Lackiererei, Kraftfahrzeugwerkstatt, Schneiderei, Gas/Wasser/Sanitär usw. sind als Tätigkeitsfelder ebenfalls sehr verbreitet. Die sozialen Dienstleistungen stellen ein weiteres ausgedehntes Betätigungsfeld dar, gefolgt von Angeboten aus dem Küchen- und Kantinenbereich. Innovativ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haben sich insbesondere in den Bereichen Umweltschutz und Recycling hervorgetan (53% BAG Arbeit). In der alternativen Landwirtschaft sind Arbeitsplätze überwiegend für ehemals Alkohol- und Drogenabhängige entstanden.

Die Arbeitsplätze stellen oft (etwa: Metall-, Holz- und Baubereich) einfache Arbeitsanforderungen. Anspruchsvolle handwerkliche Tätigkeiten oder Arbeitsplätze mit höheren technischen Anforderungen kommen ebenfalls vor, bilden jedoch eher die Ausnahme.

Auf die Bedeutung d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tstandenen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ABS)* als Trägerorganisationen für die Arbeitsförderung ist bereits hingewiesen worden. Für die *Finanzierung* trugen in den Jahren 1991 bis 1994 überwiegend die Treuhandanstalt (THA) und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Sorge. Die THA stellte betriebliche Restpotentiale (Gebäude, Dienstleistung, Arbeitsmittel) und Finanzierungsanteile bereit, die Bundesanstalt finanzierte die ABM und die pauschalierten Lohnkostenzuschüsse. Zunehmend wird die Kofinanzierung von den ostdeutschen Ländern übernommen. Das Instrument des BSHG mit seiner Möglichkeit der "Hilfe zur Arbeit" in der Entgeltvariante wird erst in jüngerer Zeit intensiver genutzt.

Die Tätigkeitsfelder der ABS-Beschäftigten zeigen ein deutliches Übergewicht im Bereich Sanierung mit besonderer Orientierung auf Demontage, Abriß, Sanierung auf industriellen Altflächen, Sanierung von Militärstandorten und Bergbausanierung. Im Bereich der Umwelt konzentrieren sich die Tätigkeiten auf die Beseitigung von Umweltschäden, die Landschaftspflege und den Landschaftsschutz, die Pflege von Grünflächen, die Wohngebietsverschönerung, die Beräumung von Ufern und Gewässern und die Landschaftspflege und den Landschaftsschutz.

Im Freizeit und Tourismusbereich ging es um die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und der Dienstleistungen, die Schaffung oder Erhaltung von Naherholungseinrichtungen, die Planung oder den Bau von Wanderwegen und Radwegen und ähnliches. Die innovatorischen Bereiche wie Stadt- und Regionalentwicklung mit Erfassungs-, Planungs- und Projektierungsarbeiten für die Gewerbe-, Standort-, Stadt- oder Regionalentwicklung sowie die Entwicklung neuer Produkte oder Verfahren, aber auch die ökologische Tierhaltung und der Landbau sind in geringerem Maße entwickelt. Marktnahe Bereiche wie handwerkliche Leistungen, einschließlich Wohnungssanierung und Denkmalpflege, Recycling industrieller Produkte und die Aufarbeitung von Maschinen und Geräten zur Wiederverwendung (etwa: Osteuropa, Dritte Welt) sind ebenso selten vertreten wie innovative Dienstleistungen. Im sozialen Bereich überwiegen die Tätigkeiten in Sozialeinrichtungen oder die soziale Produktion wie Reparaturen oder Produktion für soziale Märkte (Kleiderkammern für Bedürftige und ähnliches) sowie Dienstleistungen etwa von Kantinen und Wäschereien.

Die strukturpolitischen Erfolge der ABS-Gesellschaften beschränken sich daher mehr oder weniger auf die Lösung von Sanierungsproblemen, haben aber meist keine ausgeprägte innovative Zielrichtung.

Gemessen an den Wiedereingliederungsquoten sind auch die arbeitsmarktpolitischen Erfolge eher gering. Von den vorzeitig aus ABM ausgeschiedenen Teilnehmern haben nur wenige die Maßnahmen zugunsten regulärer Beschäftigung verlassen (20%; Knuth). Diese nicht sehr ermutigenden Ergebnisse dürften darauf zurückzuführen sein, daß der Qualifizierungsanteil der individuellen Arbeitsförd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lediglich 20% betragen hat, gleichzeitig aber der Qualifizierungsbedarf aufgrund der sich drastisch verändernd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viel ausgeprägter ist 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arüber hinaus wurde der zulässige Qualifizierungsanteil selten ausgeschöpft, nur wenige Teilnehmer an ABM in den ABS Gesellschaften erhielten überhaupt eine arbeitsbegleitende Qualifizierung (25%; Knuth).

Die ABS sollten nach der Treuhand-Rahmenvereinbarung von 1991 die Neugründung von Unternehmen und entsprechend den ABM-Regelungen die Schaffung von Dauerarbeitsplätzen vorbereiten. Beides ist nur in engen Grenzen gelungen. Nur ein verschwindend kleiner Anteil von Dauerarbeitsplätzen sind in den ABS-Gesellschaften aus ABM-Projekten entstanden (5,6% der geförderten Arbeitsplätze; Knuth).

## 5. ANFORDERUNGEN

Es ist eine Binsenweisheit, daß die Arbeitsmärkte in Europa im Ungleichgewicht sind. Die quantitativen Folgen liegen in einem außerordentlich hohen Niveau der Arbeitslosigkeit, die qualitativen Folgen betreffen die Strukturierung der Arbeitslosigkeit. Von Arbeitslosigkeit besonders betroffen sind jene Gruppe von Menschen, die im Wettbewerb um die knappen Arbeitsplätze nur geringe Chancen haben. Diese geringen Chancen entstehen im Extremfall durch direkte Diskriminierung, im Regelfall über vergleichsweise wenig ausgeprägte funktionale und extrafunktionale Qualifikationen.

Arbeitsmarktpolitik für Arbeitskräfte mit geringen Wettbewerbschancen oder ausgeprägten Risikofaktoren wird nur dann erfolgreich sein, wenn - abgesehen von dem Fall der direkten Diskriminierung - die Wettbewerbschancen über die Förderung von außerberuflichen und beruflichen Qualifikationen verbessert werden. Man darf sich dabei nicht täuschen: Selbst eine Verbesserung der Wettbewerbschancen über entsprechend steigende Qualifikationen wird nicht



dazu führen, daß die Arbeitsmärkte quantitativ ins Gleichgewicht kommen. Ein deutlicher Anstieg des gesamtwirtschaftlichen Beschäftigungsgrades ist nur über eine gezielte Beschäftigungspolitik möglich. Arbeitsmarktpolitik kann aber die Arbeitsmarktchancen von benachteiligten Arbeitskräftegruppen verbessern.

### *Kosten und Nutzen - der volkswirtschaftliche Blick*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ind an der Schnittstelle zwischen Arbeitsmarktpolitik und Sozialpolitik tätig. Mit ihrer Tätigkeit bieten sie Menschen, die ohne dies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 in vielen Fällen sogar mit Sicherheit grenzender Wahrscheinlichkeit, arbeitslos wären, zumindest für eine begrenzte Zeit einen Arbeitsplatz zu den tariflichen und arbeitsrechtlichen Bedingungen des regulären Arbeitsmarktes. Die quantitative Entlastungsfunktion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für den Arbeitsmarkt, deren Dimension bereits verdeutlicht wurde, ist von großer Bedeutung für die betroffenen Menschen und die gesamte Volkswirtschaft. Dies gilt umso mehr, da die Maßnahmen gesamtfiskalisch eine hohe Selbstfinanzierungsquote haben. Sie sind volkswirtschaftlich gesehen, im Vergleich zur Finanzierung von Arbeitslosigkeit, nicht teuer. Dies macht zusammen mit der tariflichen und arbeitsrechtlichen Ausgestaltung eine deutliche Stärke des deutschen Systems der Arbeitsförderung aus.

Einige kritische Stimmen gegen die Aufrechterhaltung hoher tarifpolitischer und arbeitsrechtlicher Standards sehen hierin allerdings auch eine Schwäche, da die Mobilitätsbereitschaft der Maßnahmeteilnehmer negativ beeinflusst werden kann. Obwohl diese Zusammenhänge außerordentlich umstritten sind, gibt es bei einzelnen Beschäftigungsträgern und einigen neueren Ansätzen der Arbeitsmarktpolitik die Tendenz zu einem speziellen Tarifgefüge für die öffentliche Beschäftigung.

Es muß auch bedacht werden, in welchem Ausmaß das breit gefächerte und bei hohen Standards auch anspruchsvolle System angesichts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en mit ihren fiskalischen Belastungen weiter in der alten Form und in dem gewohnten Umfang finanziert werden kann.

### *Der qualitative Blick - die Verbindung von Arbeitsmarktpolitik und Sozialpolitik*

Die quantitative Bedeutung ist nicht alles. Der Erfol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Bemühungen wird sich daran bemessen, wie hoch die Wiedereingliederungsquote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ist. Aufgrund der besonderen Merkmale des Personenkreises, der von d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betreut wird, ist die Frage, in welchem Ausmaß die Wiedereingliederung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gelingt, gerade für diese Gesellschaften besonders wichtig.

Bei den von den BQGs betreuten Problemgruppen des Arbeitsmarktes handelt es sich oft um Menschen mit besonderen physischen und psychischen Beeinträchtigungen und qualifikatorischen Defiziten. Die Erfahrungen mit den verschiedenen Vorhaben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zeigen, daß erfolgreiche Integration vor allem die Vermittlung von Leistungsbereitschaft und Leistungswillen und die im Arbeitsleben geforderten Basisqualifikationen wie Pünktlichkeit, Belastbarkeit und Berechenbarkeit bedeutet. Gelingt dies, gelingt auch die Vermittlung von beruflichen Qualifikationen der jeweils notwendigen Qualität und die Integration in den regulären Arbeitsmarkt.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erfordert dies gewaltige Anstrengungen zur Vermittlung der sozialen und beruflichen Qualifikationen.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tellen sich diesen Anforderungen und werden dabei von jenen arbeitsmarktpolitischen Programmen unterstützt, die eine deutliche Qualifizierungskomponente enthalten. Unglücklicherweise sind die Qualifizierungsanteile oft nur schmal bemessen. Vor allem aber ist das Personal, das die Qualifizierung leisten soll, in vielen Fällen für diese Aufgabe ungenügend vorbereitet. Zum einen fehlt es an der sozialpädagogischen Kompetenz (ein besonderes Proble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m anderen häufig auch an einer angemessenen fachlich-handwerklichen Qualifikation. Zur Lösung dieses Problems scheint es dringend erforderlich zu sein, einheitliche Ausbildungsgänge und Curricula für die sozialpädagogischen und fachlichen Anleiter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zu entwickeln.

Aufgrund der zunehmenden Strukturierung der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 werden sich auch die ABS-Gesellschaften stärker als bisher sozialpolitisch orientieren und die Beschäftigung von Schwervermittelbaren in den Mittelpunkt ihrer Aufgaben stellen müssen. Sie werden damit vor denselben Problem stehen wie die BQG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im Spannungsfeld von arbeitsmarktpolitischer Aufgabe und sozialpädagogischen und qualifizierenden Bemühungen ihre Rolle finden müssen.

Von Bedeutung für den Erfolg der Reintegration von Zielgruppen und der qualifikatorischen Anstrengungen ist dabei die Einbindung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ie lokalen Wirtschafts- und Ausbildungszusammenhänge. Projekte und Initiativen sind umso erfolgreicher, je enger die Zusammenarbeit mit den Kammern, Verbänden und anderen Unternehmen ist, je stärker die Qualifizierungsziele, Ausbildungsvermittlungen und Ausbildungszertifizierungen mit den Vertretern des regulären Beschäftigungssystems abgestimmt sind. Es ist unstrittig, daß der Aufbau dieser lokalen Netzwerke vorangetrieben werden muß.

Die genannten Argumente dürfen nicht darüber hinwegtäuschen, daß angesichts der Besonderheiten der von d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betreuten Risikogruppen bei sozialen Defiziten, diskontinuierlichen Erwerbsverläufen und gesundheitlichen - psychischen und physischen - Beeinträchtigungen eine sehr spezifische Gruppe von Arbeitskräften deutlich erkennbar ist, die auch bei intensiver Betreuung und überdurchschnittlich ausgeprägten Bemühungen um Qualifizierung nur wenig Möglichkeiten der Integration in den ersten Arbeitsmarkt haben werden oder entsprechend ihrer eigenen Lebensbewertung nur wenig Sinn in einer weiteren Integration in ein von ihnen als belastend empfundenenes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system sehen. Es ist schwer, diese Gruppe von Menschen quantitativ zu fassen. Für diese Personen werden Qualifikation, gleich ob beruflich oder extrafunktional, die Integrationsmöglichkeiten nicht verbessern. Zur Vermeidung sozialer Ausgrenzung, die einzige Lebensalternative, die für diese Menschen ohne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sche Hilfe denkbar ist, bietet sich die Sicherung von Dauerarbeitsplätzen an, die im gegenwärtigen System der Arbeitsförderung von den BQGs nicht geleistet werden kann und erst jenseits der jeweils befristeten Individualförderung über den deutlichen Ausbau der dauerfinanzierten Projektförderung erreicht werden müßte.

### *Strukturpolitik - die Rolle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Eine besondere Rolle vor allem für die ABS Gesellschaften der neuen Bundesländer spielt die strukturpolitische Einbindung. Die ursprüngliche Konzeption, die ABS-Gesellschaften nicht nur mit arbeitsmarktentlastenden Aufgaben zu betrauen, sondern sie mit in die dringend notwendigen Arbeiten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Infra-, Produktions- und Dienstleistungsstruktur einzubinden, hat sich dabei durchaus bewährt. Allerdings sind heute neue und stärker innovatorische Tätigkeitsprofile zur Entwicklung der regionalen Potentiale erforderlich. Neue

Projekte im infrastrukturellen, touristischen und kulturellen Bereich sowie in der ökologischen Umweltsanierung und im Landschaftsschutz entstehen nur zögerlich, die Verbindung zwischen Arbeitsmarkt und Strukturpolitik glückt oft nur unzureichend. Dies hängt damit zusammen, daß die Koordination zwischen den verschiedenen Politikbereichen - Arbeitsmarktpolitik, regionale Strukturpolitik und Wirtschaftsförderung - meist nicht entwickelt ist. Die verschiedenen regionalen Akteure wie Kommunen, Landratsämt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Unternehmen und Trägergesellschaften koordinieren in der Regel ihre Tätigkeit nur ungenügend. Für die für BQGs und die ABS-Gesellschaften notwendige strukturpolitische Einbindung gilt, daß bei de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von Projekten sowie der Bereitstellung der Kofinanzierung die direkte Kooperation mit den lokalen und regionalen Akteuren zwingend notwendig ist. Der Aufbau von gut funktionierenden formellen und informellen Netzwerken ist daher ebenso wie die Verzahnungen der Politikbereiche wichtig und gegenüber dem gegenwärtigen Stand deutlich verbesserungsfähig.

### *Finanzierung - die Möglichkeiten und Grenzen*

Das oben umrissene Volumen der öffentlichen Förderung und die Reichhaltigkeit der Maßnahmenteilen läßt vermuten, daß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mit der Finanzierung ihrer Vorhaben keine Probleme haben dürften. Diese Vermutung ist in vielen Fällen falsch. Die Vielzahl der Projekte und Initiativen begründet die scharfe Konkurrenz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m die öffentlichen Mittel und konstituiert finanzielle Knappheit.

Zusätzlich und für viele Betrachter wohl auch paradoxerweise stellen der Umfang und die Vielfalt der Fördermöglichkeiten und der inhaltlichen Anforderungen der Programme an die Projektträge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uch vor Probleme. Der 'Förderungsdschungel' und die 'Antragsberge' bedingen hohe Informationskosten für die Auswahl der jeweils geeigneten Maßnahmenteil und des Finanzierungsmix. Neben den Informationskosten entstehen für die BQGs Transaktionskosten, da die Antragstellung und Durchführung der Förderprogramme an einen hohen administrativen Aufwand gebunden ist. Bürokratie und Administration stellen in Deutschland oft unerwartet hohe Anforderungen.

Viele Fördermaßnahmen - zum Beispiel die Strukturfonds - fordern von den Zuwendungsempfängern eine Kofinanzierung durch andere öffentliche Mittel. Die Forderung nach angemessener Kofinanzierung ist ein begrüßenswertes Politikelement, da sie private Anstrengungen ermutigen, bei der Prioritätensetzung helfen und den verantwortungsvollen Umgang mit knappen Mitteln fördern.

Es ist auch darauf hinzuweisen, daß die zur Verfügung gestellten Programme häufig wechseln und verändert werden. Die sich ständig verändernde Förderlandschaft erfordert besondere Aufmerksamkeit mit entsprechenden Risiken für die zukünftige Entwicklung. Die Beantragung öffentlicher Mittel führt dann nicht zum Erfolg, wenn Politik andere Akzente setzt und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ich darauf nicht rechtzeitig eingestellt haben. Ein sehr deutliches Beispiel für diese Problemlage bieten die ABS Gesellschaften. Die sich zunehmend strukturierende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 führt auch zu einer Veränderung der Förderbedingungen zugunsten von Problemgruppen. Wollen die ABS Gesellschaften die Fördermöglichkeiten weiter vernünftig nutzen, müssen sie sich bei Strafe des möglichen Unterganges stärker zu diesem Wechsel der Förderbedingungen bekennen und unter anderem weit mehr die Möglichkeiten des BSHG nutzen.

Die Finanzierungsfragen werden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wegen der erkennbaren Notwendigkeit der Konsolidierung der öffentlichen Finanzen und der damit verbundenen Einschränkung der Fördervolumina der Maßnahm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sowie der Bundes- und Landesprogramme zunehmend wichtiger, da die Finanzierung von Maßnahmen durch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immer enger wird. Auch die Förderkonditionen werden sich weiter verschärfen, einige Sonderregelungen werden auch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auslaufen.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werden unter den Druck geraten, über Eigenmittel Finanzierungslücken auszugleichen.

Ein gewisser Zwang zur Erwirtschaftung von Eigenmitteln besteht ohnehin seit langem, da die Unternehmen zur Kofinanzierung einiger Programme und zur Finanzierung von nicht durch die Programme getragenen Kosten und Investitionen Eigenmittel benötigen. Die seit einiger Zeit zu beobachtenden und zunehmenden Anstrengungen zur Erwirtschaftung von Eigenmitteln über eine stärkere Marktorientierung und erwerbswirtschaftlich bestimmter Preisbestimmung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führt jedoch zu einigen neuen Entwicklungen, die neben den Chancen auch Risiken bergen.

### *Marktübergänge - was geht und was nicht geht*

Es ist unmittelbar einsichtig, daß eine stärkere Marktorientierung den Konflikt zwischen der konkurrenzbestimmten Notwendigkeit betriebswirtschaftlicher Effizienz und der sozialpolitischen Aufgabe der Qualifizierung und Beschäftigung leistungsgeminderter und leistungsschwacher Menschen verstärkt. Betriebliche Effizienz erfordert die Entlassung nicht leistungsfähiger Arbeitskräfte, die sozialpolitische Aufgabe verlangt ihre weitere Beschäftigung. Im ersteren Fall käme es zu einer verstärkten Selektion zu Ungunsten der eigentlich zu fördernden Personen, im zweiten Fall zum Ausscheiden aus dem Markt und dem Förderprogramm. Ein schwieriger Konflikt, der in vielen Fällen aufgrund der Konstruktion der Förderprogramme kaum zu lösen ist.

Diese Konstruktionen legen d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erhebliche Beschränkungen auf. Eine Reihe von Programmen ist an die "Gemeinnützigkeit"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 und die überwiegende Zahl an die Bedingung der "Zusätzlichkeit" der durchgeführten Tätigkeit gebunden. Marktorientierung meint aber nachgerade ein hohes Maß an flexiblem Mitteleinsatz und Mittel für Investitionen sowie ein gewinnorientiertes Verhalten, das durch die Gemeinnützigkeit ausgeschlossen ist. Ähnlich verhält es sich mit dem Kriterium der "Zusätzlichkeit". Marktorientierung erfordert eine Tätigkeit, die sich an dem Marktüblichen orientiert.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entsteht wieder der Konflikt des "Entweder-Oder", obwohl sie eine "Sowohl-als-Auch-Konzeption" der Fördermaßnahmen benötigen würden.

Wettbewerbsnachteile entstehen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uch aus anderen Gründen. So ist die Finanzierung von Investitionen durch die meisten arbeitsmarktpolitischen Programme nicht oder nur sehr eingeschränkt möglich, der Förderungsweg, der kleineren und mittleren Unternehmen im Wege der Wirtschaftsförderung zur Verfügung steht, ist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meist aufgrund ihrer arbeitsmarktpolitischen Orientierung auch versperrt. Kredite - meist können die verlangten Sicherheiten nicht gegeben werden - stellt das Bankensystem d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oft nur zögerlich zur Verfügung. Die vom Qualitätswettbewerb verlangten notwendigen Modernisierungen müssen dann unterbleiben, die vom Markt verlangten technischen Standards können nicht erfüllt werden. Die im Vergleich zu gewinnorientierten Unternehmen geringere Produktivität der meist leistungsschwachen oder leistungsgeminderten Arbeitskräfte und die Belastungen durch die Betreuung und Qualifizierung der aufgrund der zeitlichen Begrenzung der Individualförderung häufig wechselnden Maßnahmeteilnehmer (Rotation) führt zusätzlich zu Konkurrenzschäden auch bei der Einhaltung der Qualitätsstandards.

### *Was geschehen sollte*

Der Marktorientierung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ind damit deutliche Grenzen gesetzt, Grenzen, die sozial- und arbeitsmarktpolitisch auch durchaus vernünftig sind. Aber auch aus ordnungspolitischen Gründen sind einer ungezügelter Marktorientierung bei gleichzeitiger Subventionierung und einer ausufernden Dominanz des zweiten Arbeitsmarktes Grenzen zu setzen.

Staatliche Subventionierung privater Tätigkeit führt leicht zu Wettbewerbsverzerrungen und kann dann privatwirtschaftliche Aktivitäten behindern. Dies kann zu einer Verdrängung privater Anbieter von Gütern und Diensten führen und zu Spannungen zwischen der lokalen Wirtschaft und d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beitragen. Allerdings ist auch auf die positiven Effekte de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uf die private Wirtschaft, die im lokalen und regionalen Bereich über multiplikative Wirkungen zum Teil eine große Bedeutung haben, aufmerksam zu machen. Durch Zulieferung und Stabilisierung von Einkommen und Kaufkraft wird über die kaufkräftige Nachfrage nach Produkten und Dienstleistungen auch der regionale Markt gekräftigt.

Die neuer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ntwicklung stellt auch die Arbeitsmarktpolitik vor Herausforderungen. Die Architektur im Verhältnis Markt und Staat muß neu überdacht werden. Für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ls bewährte und wichtige Träger der Arbeitsmarktpolitik ergeben sich dabei Chancen, aber auch Risiken. Die Chancen liegen in der Nutzung der Stärken des deutschen System, die Risiken in den erkennbaren Schwächen.

Die Stärken zeigen sich in der differenzierten Förderstruktur bei erkennbaren finanziellen Anstrengungen im Volumen. Das Bemühen, nicht allein Arbeitsmarktentlastungen zu suchen, sondern die Integrationsaufgabe ernst zuzunehmen und auch strukturpolitischen Anforderungen zu genügen, verdient hohe Anerkennung.

Die Schwächen zeigen sich in den erkennbaren Grenzen dieser Bemühungen. Die Betreuungs- und Qualifizierungskomponente der arbeitsmarktpolitischen Programme und nur wenig entwickelte innovatorische strukturpolitische Ansätze genügen den zu stellenden Anforderungen nicht. Die Vernetzung der Politikbereiche gelingt nur selten.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haben heute sowohl eine sozialpolitische Integrationsfunktion, eine strukturpolitische Produktionsfunktion und - natürlich - die beschäftigungssichernde Arbeitsmarktfunktion. Sie sollten daher zutreffend und einem Vorschlag der BAG-Arbeit (BAG-Arbeit 1994) folgend als soziale Arbeitsagenturen bezeichnet werden und aufgrund ihrer nicht zu überschätzenden gesellschaftspolitischen Bedeutung auch entsprechend unterstützt werden. Diese Unterstützung müßte darin bestehen, restriktive und behindernde Regelungen der öffentlichen Beschäftigungsförderung zugunsten eines modernen Konzeptes der organisatorischen und wirtschaftlichen Förderung dieses neuen Unternehmenstyps mit langer Tradition aufzuheben.

## **Literaturverzeichnis**

**Amtliche Nachrich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nba)**, Arbeitsmarkt 1994, Nürnberg 1995

**Bach, H./Spitznagel, E.**, Arbeitsmarktpolitische Maßnahmen - Entlastungswirkungen und Budget-Effekte, in: Beiträge aus der Arbeitsmarktforschung- und Berufsforschung, Heft 163, Nürnberg 1992

**Bolle, M.**, Die quantitative Dimension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dem zweiten Arbeitsmarkt. Bericht an die BAG Arbeit, unveröff. Manuskript, FU Berlin, 1995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V.**, Aufgaben und Ziele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Grundsatzpositionen der BAG-Arbeit,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Berlin 1994.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V.**, Geschäftsberichte 1993 und 1994, Berlin

**BBJ-Consult (Hrsg.)**, Die Praxis der Sozialhilfeträger bei der Hilfe zur Arbeit, BBJ-Consult Info 22, Berlin 1990

**Böhringer, H.**, Aktuelle Lage und Zukunft des 'Zweiten Arbeitsmarktes' - Beschäftigungsinitiativen der Bundesrepublik, in: Oppel, H. u.a. (Hrsg.), Soziale Beschäftigungsformen, München 1991

**Böhringer, H.**, Die Hilfeform Arbeit, Der Weg zum Sozialunternehmen, in: Mühlfeld, C. u.a. (Hrsg.), Neue Arbeit: Beschäftigungsinitiativen, Frankfurt 1989

**Böhringer, H.**, Brücke oder Sackgasse, in: Nachrichten Parität, Heft 7/8, 1959

**Bosch, 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in: Seifert, H., (Hrsg.), Reform der Arbeitsmarktpolitik, Köln 1995

**Brinkmann, C.**, Arbeitsmarktpolitik in Ostdeutschland: Eine Zwischenbilanz nach fünf Jahren Transformation, in: Beschäftigungsobservatorium Ostdeutschland, Nr. 16/17, November 1995

**Brinkmann, C. u.a.**, Zur Entwicklung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in Ostdeutschland,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Heft 4, 1995

**Brinkmann, C./Wolfinger, C.**, Aktive Arbeitsmarktpolitik mit einem neuen Instrument. Pauschalierte Lohnkostenzuschüsse zur Arbeitsförderung, IAB-Werkstattbericht Nr. 9, Oktober 1994

**Bundesminister**, Arbeits- und Sozialstatistik, Ergebnisse 1994,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Hrsg.), Bonn 1994

**Emmerich, K/Wolfinger, C.**, Maßnahmen nach §249h AFG, I: Finanzierungsstruktur der Kosten pro Arbeitsplatz besser als bei ABM, IAB-Kurzbericht Nr. 6, Nürnberg 1995

- Freidinger, G.**, Arbeitsmarktpolitik und Beschäftigungsförderung, in: Stauder, J. (Hrsg.), Grundlagen der kommunalen Wirtschaftsförderung, Marburg 1991
- GIB** (Gesellschaft zur Information und Beratung örtlicher Beschäftigungsinitiativen und Selbsthilfegruppen gGmbH), (Hrsg.), Soziale Betriebe, GIB-Info, November 1995
- Kaiser, M.**, Gesellschaften zur Arbeitsförderung, Beschäftigung und Strukturentwicklung als Träger arbeitsmarktpolitischer Maßnahmen, IAB-Werkstattbericht Nr. 10, Nürnberg 1992
- Kaiser, M.**,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initiativ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ausforderungen an eine lokale Beschäftigungspolitik, Manuskript o.J., o.E.
- Kiefer, H.**, Rechtliche Grundlagen und Finanzierungsstrategien, in: Freidinger, G./Schulze-Böing, M. (Hrsg.), Handbuch der kommunalen Arbeitsmarktpolitik, Marburg 1993
- Knuth, M.**, ABS-Gesellschaften zwischen Abbau und Aufbau, in: WSI-Mitteilungen, Heft 7, 1995
- Kress, U.**, Der 'Zweite Arbeitsmarkt' in der Diskussion, IAB-Werkstattbericht,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Nr. 5, 30.5.1994
- Lindner, H. u.a.**,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für Sozialhilfeempfänger durch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Gutachten im Auftrage des Bundesministers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Tübingen 1992
- Lüsebrink, K.**, Arbeit plus Qualifizierung statt Sozialhilfe,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Heft 1, 1993
- Meyer auf der Heyde, A.**, Der europäische Sozialfonds als Finanzierungsinstrument kommunaler Beschäftigungspolitik, in: Freidinger, G./Schulze-Böing, M. (Hrsg.), Handbuch der kommunalen Arbeitsmarktpolitik, Marburg 1993
- Meyer auf der Heyde, A.**, Finanzierung von Beschäftigungsinitiativen - Ein Überblick, in: Oppel, H. u.a. (Hrsg.), Soziale Beschäftigungsformen, München 1991
- Nees, A.**, Finanzierung sozialer Beschäftigungsinitiativen aus Mitteln der Sozialhilfe, in: Oppel, H. u.a. (Hrsg.), Soziale Beschäftigungsformen, München 1991
- Schmid, A. u.a.**, Neue Wege der Arbeitsmarktpolitik für Langzeitarbeitslose - Sonderprogramme und Modellvorhaben, in: Schwerpunktheft Beschäftigungspolitik,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1992
- Sperling, I.**, Probleme des 'Zweiten Arbeitsmarktes', in: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Jahrgang 1994, Nr. 8, August 1994
- Spitznagel, E.**, Allgemeine Maßnahmen zur Arbeitsbeschaffung (ABM)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Schwerpunktheft Beschäftigungspolitik,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1992





문서 번호 48

브란덴부르크 주 1996 년 계속교육 보고서

1996 년 12 월 20 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행한 1996 년도 계속교육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교육연수 제도가 브란덴부르크주에도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피고용자가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연수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도 정해졌다. 신연방주 중에서 이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된 곳은 브란덴부르크주뿐이다.

1996 년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 사이에 1663 개의 프로그램이 연방주로부터 교육연수 참가 대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받았다. 그 중 27%인 445 회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었고, 25%인 414 개 프로그램은 문화, 그리고 48%인 794 개 프로그램은 정치와 관련된 성인교육이었다. 1994 년과 1996 년 사이에 주정부 예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재원은 천 3 백 3 십만 마르크에 달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비용의 지원 및 연방주 공인기관 및 민간교육시설 그리고 중점 과제 모델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1994 년도 8 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171,440 명의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84,258 명이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는 추가교육 및 직업전환교육에 참가하였다. 반면 1995 년 8 월에는 164,166 명 중 34,341 명이 참가하였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때문에 주정부는 “경제현실 밀착형 자격능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직능장려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위한 경쟁력의 개선, 일자리의 안정화 및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1992 년 이후 약 34,800 명의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자격능력을 획득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 당 1,300 마르크 상당의 평균 지원액이 소요되었다. 나아가 실업자가 창업을 할 때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은 1996 년도 총 720 만 마르크 상당의 총 자체 예산 중 530 만 마르크를 계속교육에 투입하였다.

출처: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644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3644**

## **Bericht**

der Landesregierung

### **Weiterbildungsbericht 1996 für das Land Brandenburg**

Datum des Eingangs: 20.12.1996 / Ausgegeben: 02.01.1997

## Inhaltsverzeichnis

	Seite	
1.		Vorbemerkung 6
2.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 aufgrund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BbgWBG) 6
2.1.		Regierungserklärung 6
2.2.		Weiterbildung in der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7
2.3.		Ziele und Regelungsinstrumente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8
2.3.1.		Sicherung der Grundversorgung (Angebotssicherung) 8
2.3.2.		Anerkennung von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Landesorganisationen und Heimbildungsstätten (Qualitätssicherung) 9
2.3.3.		Kooperation und Koordination auf Kreis- und Landesebene 10
2.3.4.		Rechtsanspruch auf bezahlte Bildungsfreistellung 11
2.3.5.		Förderung im Rahmen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12
3.		Überblick üb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zu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13
4.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Landesorganisationen und Heimbildungsstätten 16
4.1.		Anerkennungsverfahren 16
4.2.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in kommunaler Trägerschaft 18
4.3.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in freier Trägerschaft 19
4.4.		Anerkannte Landesorganisationen 20
4.5.		Anerkannte Heimbildungsstätten/Heimvolkshochschulen 26
4.6.		Sonstig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30
5.		Entwicklung der Grundversorgung 33
5.1.		Umfang und Verteilung 34
5.2.		Teilnehmerzahlen 37
6.		Regionale Weiterbildungsbeiräte 38
6.1.		Aufbau und Entwicklung 38
6.2.		Überblick über die Mitglieder der Beiräte 40
7.		Landesbeirat für Weiterbildung 46
8.		Bildungsfreistellung 49
8.1.		Bedeutung der Bildungsfreistellung 49
8.2.		Grundsätze der Bildungsfreistellung 50
8.3.		Grundsätze des Anerkennungsverfahrens 51
8.4.		Freistellungsrelevante Inhaltsbereiche 53
8.5.		Angebot und Nachfrage 55
9.		Schulabschlußbezogene Weiterbildung von Erwachsenen 60
9.1.		Zweiter Bildungsweg (Volkshochschulen, Abendschulen, Kollegs) 60
9.2.		Telekolleg II 66
10.		Fernunterricht 69
11.		Fachlich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71

11.1.	Ziele und Aufgaben	71
11.2.	Adressaten der fachlichen Förderung	73
11.3.	Bilanz der bisherigen Unterstützungsleistungen	73
12.	Finanziell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durch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76
13.	Modellprojekte	78
13.1.	Bildungskooperation in der Uckermark	78
13.2.	Perspektiven regionaler Weiterbildung	79
13.3.	Jugend und Homosexualität	80
13.4.	Politische Bildungsoffensive im Land Brandenburg	81
13.5.	Optionen auf die Nutzung der Bildungsfreistellung gemäß BbgWBG durch anerkannte Einrichtungen in freier Trägerschaft	81
13.6.	Weiterbildungs-Informations-Laden	82
13.7.	Aufbau von Konsultationsstützpunkten kultureller Weiterbildung	82
13.8.	Entwicklung zu einer Weiterbildungseinrichtung in Brandenburg an der Havel	83
13.9.	Entwicklung und Erprobung regionaler Strukturberatung für Bildungseinrichtungen im Land Brandenburg	84
13.10.	Regionale Tage der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85
14.	Weiterbildung in der Zuständigkeit weiterer Ressorts	85
14.1.	Berufli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MASGF)	85
14.1.1.	Zur beschäftigungspolitischen Wirksamkeit von Qualifizierung	85
14.1.2.	Arbeitsfelder wirtschaftsnaher Qualifizierung im Land Brandenburg	87
14.1.2.1.	Qualifizierung i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87
14.1.2.2.	Projektförderung für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88
14.1.2.3.	Förderung der Existenzgründung aus Arbeitslosigkeit	88
14.1.2.4.	Marktorientierte ESF-Projektförderung	89
14.1.3.	Zielgruppenorientierte Qualifizierung	90
14.1.4.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92
14.2.	Politis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LZpB)	95
14.2.1.	Allgemeine Grundsätze der Arbeit der Brandenburg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95
14.2.2.	Förderung	97
14.2.2.1.	Zuwendungen für Maßnahmen der politischen Bildung	97
14.2.3.	Trägerprofile	98
14.2.4.	Die Bedeutung des Gesetzes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für freie Träger politischer Bildung im Land Brandenburg	98
14.2.5.	Operative Sachmittel	100
14.2.6.	Bilanz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Die Bedeutung staatlicher Förderung für die Entwicklung einer demokratischen politischen Kultur unter sich ändernden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100

14.2.7.	Anpassung der Förderpraxis an das veränderte Rezeptionsverhalten der Zielgruppen und die zukünftigen Finanzierungsmöglichkeiten	102
14.3.	Kulturelle und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ltur (MWFK)	103
14.3.1.	Kulturelle Weiterbildung	103
14.3.2.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104
14.4.	Weiterbildung im ländlichen Raum und berufli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MELF)	106
14.4.1.	Berufsbegleitende Weiterbildung für Beschäftigte im Agrarbereich	107
14.4.2.	Allgemeine Weiterbildung	109
14.4.3.	Entwicklung von Weiterbildungsstrukturen im ländlichen Raum	109
14.5.	Umweltbildung für Erwachsene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MUNR)	110
15.	Anhang	114
15.1.	Überblick über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anerkannte Landesorganisationen und anerkannte Heimbildungsstätten/Heimvolkshochschulen	114
15.2.	Übersicht über die Anzahl der Bildungsträger und der Maßnahmen in der Weiterbildungsdatenbank Brandenburg 1993 bis 1996	126
15.3.	Überblick über Bildungsträger, die berufsbegleitende Weiterbildung im Agrarbereich durchführen	130
15.4.	Überblick über Tabellen und Diagramme	131
Anlage		
Bericht des Landesbeirates für Weiterbildung		

Im Gegensatz zum Landesbeirat für Weiterbildung geht die Landesregierung davon aus, daß es den Veransaltern von Maßnahmen zur Bildungsfreistellung obliegt, diese attraktiv zu gestalten und für diese so zu werben, daß sich ausreichend zahlende Teilnehmende finden. Das Brandenburgische Weiterbildungsgesetz sieht eine Unterscheidung zwischen Veranstaltungen zur Grundversorgung und zur Bildungsfreistellung und deren Förderung ausdrücklich vor.

Die gewünschte Broschüre zu Veranstaltungsangeboten der Bildungsfreistellung liegt seit Oktober 1996 vor.

Eine Möglichkeit der Teilnahme von arbeitslos gemeldeten Personen an Veranstaltungen der Bildungsfreistellung besteht. Dies wurde auch dem Landesbeirat bereits mehrfach mitgeteilt.

## **8. Bildungsfreistellung**

### **8.1. Bedeutung der Bildungsfreistellung**

Bildungsfreistellung im Sinne des BbgWBG bedeutet Freistellung des Beschäftigten von der Arbeit zur Teilnahme an Bildungsveranstaltungen unter Fortzahlung des Arbeitsentgelts durch den Arbeitgeber.

Das Instrument der Bildungsfreistellung wurde auf Grund der Erkenntnis entwickelt, daß der sich beschleunigende technische und soziale Wandel ständige Anpassungsleistungen des einzelnen durch lebensbegleitendes Lernen erfordert. Der erhöhten Belastung des Arbeitnehmers durch die freiwillige Teilnahme an Weiterbildung ist in diesem Konzept durch den Vorteil bezahlter Freistellung von der Arbeit Rechnung zu tragen, wobei gleichzeitig auch die legitimen Interessen des Arbeitgebers zu wahren sind.

Am 24. Juni 1974 verabschiedete die Internationale Arbeitsorganisation (ILO) das Übereinkommen Nr. 140 über bezahlten Bildungsurlaub für alle Arbeitnehmer. Darin verpflichteten sich die Unterzeichnerstaaten - unter ihn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zu einer Politik, die das Ziel bezahlten Bildungsurlaubs für alle Arbeitnehmer unterstützen sollte.

Dieses Übereinkommen hat der Bundesgesetzgeber am 7. September 1976 ratifiziert (BGBl. II, S. 1526).

Die kontrovers diskutierte Frage, ob die Länder überhaupt berechtigt seien, Regelungen zur Bildungsfreistellung zu treffen, wurde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mit Beschluß vom 15. Dezember 1987 (BVerfGE 77, 308 ff.) zugunsten der Länder entschieden. Da der Bundesgesetzgeber das Recht der Arbeitnehmerweiterbildung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habe, seien die Länder kraft konkurrierender Gesetzgebungskompetenz befugt, arbeitsrechtliche Regelungen auf diesem Gebiet zu treffen. Außer in Bayern und Baden-Württemberg existieren gegenwärtig in allen alten Bundesländern gesetzliche Regelungen zur Bildungsfreistellung.

Unter den neuen Bundesländern ist Brandenburg das erste und bisher einzige, das die Bildungsfreistellung gesetzlich geregelt hat. Es ist darüber hinaus bundesweit das einzige Land, das ein Recht auf Bildungsfreistellung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Artikel 33 Abs. 2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stellt auch insofern eine Besonderheit dar, als das Recht auf Bildungsfreistellung nicht nur für berufliche und politische, sondern außerdem für kulturelle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geltend gemacht werden kann.

Die nähere Ausgestaltung dieses Anspruchs erfolgte durch das Brandenburgische Weiterbildungsgesetz vom 15. Dezember 1993. Die Übergangsvorschrift nach § 30 Abs. 1 BbgWBG verschob jedoch den Geltungsbeginn des 4. Abschnitts, der den Anspruch auf Bildungsfreistellung unter Lohnfortzahlung gemäß §§ 14 bis 26 BbgWBG regelt, auf den 1. Januar 1996. Das Verfassungsgericht des Landes Brandenburg bestätigte in seinem Urteil vom 25.07.1994 die Verfassungsgemäßheit dieses Aufschubs. Durch das spätere Inkrafttreten der Vorschriften über die bezahlte Bildungsfreistellung konnte auf die Umbruchsituation im Lande mit seinen zahlreichen kleinen, in der schwierigen Gründungsphase befindlichen Betrieben angemessen Rücksicht genommen werden.

## **8.2 Grundsätze der Bildungsfreistellung**

Die Abwägung der unterschiedlichen Interessen von Arbeitgebern einerseits und Arbeitnehmern andererseits hat zu folgenden Grundsätzen der Bildungsfreistellung geführt:

- Ein Anspruch auf Bildungsfreistellung entsteht erstmalig nach einer Wartezeit von 6 Monaten (§ 16 BbgWBG).
- Der zeitliche Rahmen des gesetzlichen Anspruchs umfaßt 10 Arbeitstage innerhalb von



2 aufeinanderfolgenden Kalenderjahren (§ 15 BbgWBG).

- Die Antragstellung muß beim Arbeitgeber so frühzeitig wie möglich, spätestens 6 Wochen vor Teilnahmebeginn erfolgen. Der Antrag kann nur in bestimmten Fällen unter schriftlicher Darlegung der Gründe vom Arbeitgeber abgelehnt werden. Kleinbetriebe genießen einen besonderen Schutz (§ 17 BbgWBG).
- Die Freistellung wird stets nur zu dem genannten Zweck gewährt; nicht in Anspruch genommene Freistellungszeiträume werden nicht abgegolten (§ 23 Abs. 2 BbgWBG).
- Auf Verlangen des Arbeitgebers sind diesem die Anmeldung, die Anerkennung der Bildungsmaßnahme und die Teilnahme an der Veranstaltung nachzuweisen (§ 17 Abs. 4 BbgWBG).
- Zusammenfassungen von Tagen der Bildungsfreistellung für künftige Jahre und auch Abweichungen von den Vorschriften der §§ 14 bis 26 BbgWBG zugunsten des Beschäftigten sind möglich (§ 18 Abs. 2 BbgWBG).

### **8.3. Grundsätze des Anerkennungsverfahrens**

Die Freistellung durch den Arbeitgeber setzt voraus, daß die vom Arbeitnehmer zur Teilnahme gewünschte Veranstaltung staatlich anerkannt ist. Dazu führt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auf Antrag des Veranstalters ein auf die einzelne Veranstaltung bezogenes Anerkennungsverfahren durch. Die Grundsätze dieses Verfahrens ergeben sich zunächst aus § 24 Abs. 1 bis 3 BbgWBG und sind in der Verordnung über die Anerkennung vo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zur Bildungsfreistellung nach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Bildungsfreistellungsverordnung - BFV) vom 22. November 1995, welche aufgrund § 24 Abs. 5 BbgWBG erlassen wurde, im einzelnen geregelt; die wichtigsten seien im folgenden skizziert:

- Die Einzelanerkennung von Veranstaltungen (§ 24 Abs. 1 BbgWBG) hat mehrere Funktionen. Sie dient dem Interesse des Arbeitnehmers, dem die Einschätzung der Geeignetheit einer Bildungsmaßnahme zur Bildungsfreistellung abgenommen wird. Der Teilnahmewunsch an bereits staatlich überprüften Veranstaltungen gegenüber dem Arbeitgeber kann auf dieser Grundlage vertreten werden. Der Arbeitgeber ist ebenfalls von der inhaltlichen Überprüfung der Bildungsmaßnahmen entlastet. Das dadurch gerechtfertigte gesteigerte Vertrauen beider Seiten bewirkt, daß ein Rechtsstreit über die Art und Eignung der Veranstaltung weitgehend entfällt. Eine gerichtliche Überprüfung

der Veranstaltung bei Zweifeln an der Geeignetheit zur Bildungsfreistellung ist dadurch jedoch dem Arbeitgeber nicht verwehrt. Für den Träger der Maßnahme bewirkt die Einzelanerkennung, daß er sich mit seinen Angeboten einerseits ständigen staatlichen Kontrollen unterzieht, andererseits durch die Anerkennung aber auch eine werbewirksame Unterstützung erhält.

- Antragsfristen und der Ausschluß rückwirkender Anerkennung (§ 1 Abs. 1 BFV) dienen der ordnungsgemäßen Durchführung des Anerkennungsverfahrens und dem Interesse des Arbeitgebers an rechtzeitiger Information.
- Die Festlegung auf berufliche, politische und kulturelle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 2 BFV) entspricht Art. 33 Abs. 2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 § 4 Abs. 4 BFV läßt einen rückwirkenden Widerruf der Anerkennung einer Veranstaltung zu, wenn der Veranstalter wiederholt schuldhaft gegen seine rechtlichen Pflichten verstoßen hat.
- Bei übereinstimmenden Wiederholungsveranstaltungen ist ein vereinfachtes Verfahren möglich (§ 5 BFV).
- Vereinfachte Verfahren sind auch bei länderübergreifenden Regelungen gemäß § 7 BFV vorgesehen. Dies erklärt sich aus den häufig ähnlichen Anerkennungsvoraussetzungen, die insbesondere für Berliner Verfahren gegeben sind, weshalb in diesem Fall eine gesetzliche Geltungsanordnung der Anerkennung auch für das Land Brandenburg geregelt ist (§ 7 Satz 4 BFV).
- Im Interesse aller Beteiligten werden Frag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für die Anerkennung unter Beteiligung von Interessenverbänden und Ressorts entschieden (§ 24 Abs. 2 BbgWBG, § 6 BFV).
- Die Berichtspflicht der Veranstalter gemäß § 26 BbgWBG und § 8 BFV sichert zugunsten der Behörde eine Beurteilungsgrundlage bezüglich der Durchführung von Veranstaltungen und deren Inanspruchnahme durch die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 Wesentlich für das Anerkennungsverfahren sind schließlich die erforderlichen Nachweise zu formalen und inhaltlichen Qualitätsmerkmalen, wie sie in § 3 BFV aufgezählt sind. Die positive Aufzählung der Kriterien in § 3 wird ergänzt durch einen Negativkatalog gemäß § 4 BFV.

## 8.4. Freistellungsrelevante Inhaltsbereiche

Artikel 33 Abs. 2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gibt die Inhaltsbereiche der Weiterbildung für die Bildungsfreistellung vor. Anerkennungsfähig sind nur Veranstaltungen der beruflichen, politischen o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Angebote der allgemeinen oder sonstigen Weiterbildung werden nicht anerkannt (§ 14 Abs. 1 BbgWBG, § 4 Abs. 3 BFV).

Zur Förderung der Anpassungs- und Behauptungskompetenz vo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spielen die Inhalte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eine wesentliche Rolle. Sie müssen sich - der Rechtsprechung zufolge - nicht auf die gegenwärtig ausgeübte Tätigkeit oder Funktionsverwendung der Teilnehmenden beziehen, sondern lediglich im Verhältnis zu einem vorhandenen Beruf des Arbeitnehmers noch einen objektiven, nachvollziehbaren und fördernden Bezug aufweisen. Denn Bildungsfreistellung erfolgt nicht zum Zweck funktionsbezogener Weiterbildung, sie ist vielmehr personenbezogen und dient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vgl. BVerfGE 77, 308 ff.) zufolge der Persönlichkeitsbildung de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ie Inhalte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leiten sich aus der Zielsetzung der Stärkung der Flexibilität und Anpassungsfähigkeit an sich verändernde Anforderungen des Arbeits- und Berufslebens her und dienen der Erarbeitung und Vermittlung unterschiedlichsten berufsfeldbezogenen und berufsfeldübergreifenden Fachwissens und der Aneignung und Verbesserung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Sie dürfen dagegen gemäß § 4 BFV nicht den überwiegend betriebsinternen Erfordernissen, der Berufsausbildung, der beruflichen Umschulung oder der beruflichen Rehabilitation dienen. Berufliche Schlüsselqualifikationen haben unter den Inhalt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einen zentralen Stellenwert, da sie die Einsicht und den Umgang mit arbeitsweltbezogenen Strukturen, Regeln und Sachzusammenhängen fördern und damit beispielsweise zur Kompetenzerweiterung im Bereich der Verantwortungsübernahme oder der Kommunikations- und Teamfähigkeit beitragen oder auch grundlegende, bei modernen Arbeitsplätzen vorausgesetzte Arbeits- und Kulturtechniken vermitteln.

Neb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gehört auch die politische Weiterbildung zu den klassischen Themenbereichen der Weiterbildung und ist von jeher Kernbestandteil der Bildungsfreistellung.

Auch in 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geht es größtenteils um die Vermittlung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Sie zielt auf Mitbestimmungsfähigkeit; im Zentrum stehen die Motivation und Befähigung, gesellschaftliche Zusammenhänge zu verstehen und zu gestalten. Denn Politik beeinflusst alle Lebensbereiche eines Menschen, und umfassende Kenntnisse sind nötig, um aktiv am öffentlichen Leben teilnehmen zu können. Damit sind die Inhalte 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nicht auf die Vermittlung staatsbürgerkundlichen Grundwissens

reduziert. Ausgeschlossen aus den Inhalten 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sind jedoch verbandsinterne Schulungen für Funktionsträger.

Brandenburg ist das erste Bundesland, in dem auch Veranstaltungen 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anerkannt werden können. § 2 Abs. 3 BFV umschreibt die Inhalte, die sich auf die Information und die Auseinandersetzung mit Prozessen und Entwicklungen in der eigenen Kultur sowie die Förderung des Verständnisses für fremde Kulturen beziehen. Der Erwerb von Fremdsprachen hat in diesem Zusammenhang überragende Bedeutung und entspricht zugleich der aktuellen Nachfrage im Land Brandenburg. Fremdsprachliche Weiterbildung schafft Voraussetzungen für die Kommunikationsfähigkeit von Menschen auch in Arbeitsbezügen. Angesichts der Diskussion um die europäische Dimension wird von der Selbstverständlichkeit von Fremdsprachenkenntnissen fü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ausgegangen. Brandenburg als Land in der Mitte Europas, auf dem Weg, sich als europäische Region in einem zusammenwachsenden Europa zu verstehen, unterstützt diese europäische Dimension über kulturelle Weiterbildung. Unter den Aspekten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die von unterschiedlichen Lebensstilen und Weltanschauungen geprägt ist, spielen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r Kultur der Sorben und die Integration der Aussiedler eine besondere Rolle. Kenntnisse über die unterschiedlichen Kulturtraditionen fördern gegenseitige unverzichtbare Toleranz und Offenheit gegenüber subjektiv Ungewohntem und Neuem. Aus dem Inhaltsspektrum kultureller Weiterbildung sind aufgrund eines Negativkatalogs demgegenüber solche Inhalte ausgegrenzt, die sich u. a. auf künstlerische, handwerkliche oder sportliche Betätigung beziehen und eher der privaten Freizeitgestaltung und Erholung dienen. Auch touristische Besichtigungen stellen keine anerkennungsfähigen Inhalte dar.

## **8.5. Angebot und Nachfrage**

Zur Beurteilung des Standes und der Entwicklung der Bildungsfreistellung sind Informationen über die Angebots und Nachfrageseite erforderlich. Dazu dient die Berichtspflicht gemäß § 26 BbgWBG und § 8 BFV. Innerhalb von vier Wochen nach Beendigung der Veranstaltung sind dem für Bildung zuständigen Ministerium Gegenstand und Verlauf der Veranstaltung, bestimmte Daten der teilnehmenden Personen in nichtpersonenbezogener Form sowie die Betriebsgröße des Arbeitgebers anzugeben.

Die darauf basierenden bisherigen Mitteilungen lassen für das Land Brandenburg zwar erste Zahlenangaben, aber auf Grund der kurzen Frist seit Inkrafttreten noch keine fundierten Rückschlüsse zu. Das zum Zeitpunkt des Berichts zur Verfügung stehende Zahlenmaterial bezieht sich lediglich auf die ersten acht Monate des Jahres 1996.

Von den insgesamt 166 registrierten unterschiedlichen Anbietern entfallen 52 (31 %) auf das

Land Brandenburg, 41 (25 %) auf das Land Berlin, 63 (38 %) auf das sonstige Bundesgebiet und 10 (6 %) auf ausländische Veransta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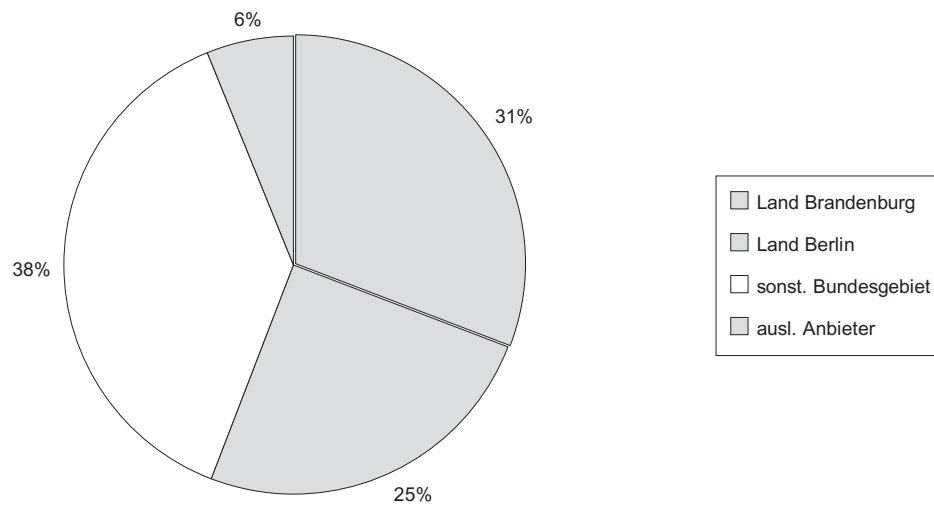


Diagramm 1: Verteilung nach Veranstaltern

Bis zum 30. August 1996 wurden, einschließlich Wiederholungsveranstaltungen, insgesamt 1663 Einzelveranstaltungen anerkannt. Davon entfielen 455 Veranstaltungen auf den Bereich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27 %), 414 Veranstaltungen gehörten Themen 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an (25 %), und 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waren 794 Veranstaltungen zuzuordnen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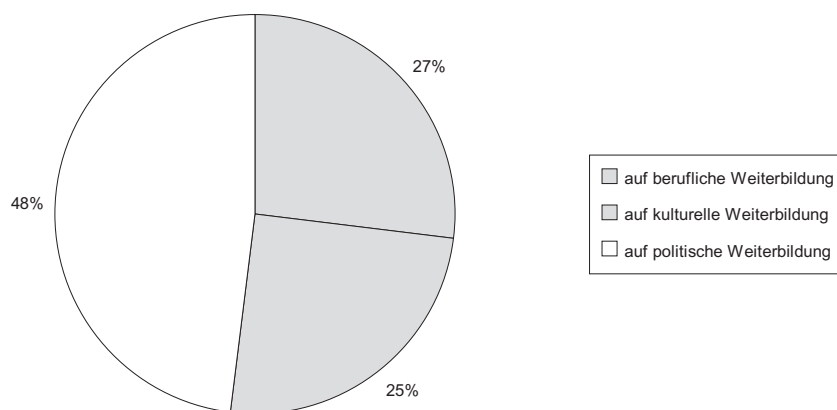


Diagramm 2: Verteilung nach Inhaltsbereichen

Für die 758 unterschiedlichen Veranstaltungsangebote, die sich ohne Berücksichtigung von Wiederholungsveranstaltungen ergeben, zeigt sich, aufgeschlüsselt nach ihren Anbietern, folgende Verteilung: 24 % dieser Veranstaltungen wurden von brandenburgischen und 21 % von Berliner Veranstaltungen angeboten. 50 % entfallen auf sonstige inländische und 5 % auf ausländische Angeb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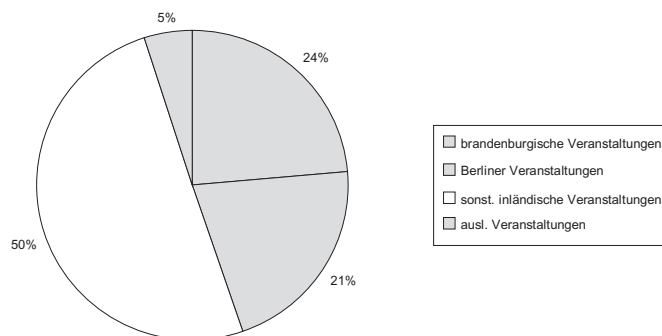


Diagramm 3: Verteilung nach Veranstaltungen

Die Inanspruchnahme der Bildungsfreistellung erfolgte zu 58,5 % durch weibliche, zu 41,5 % durch männliche Beschäftigte. Die Verteilung nach dem Lebensalter der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ist dem folgenden Diagramm zu entnehmen:

Teilnehmende 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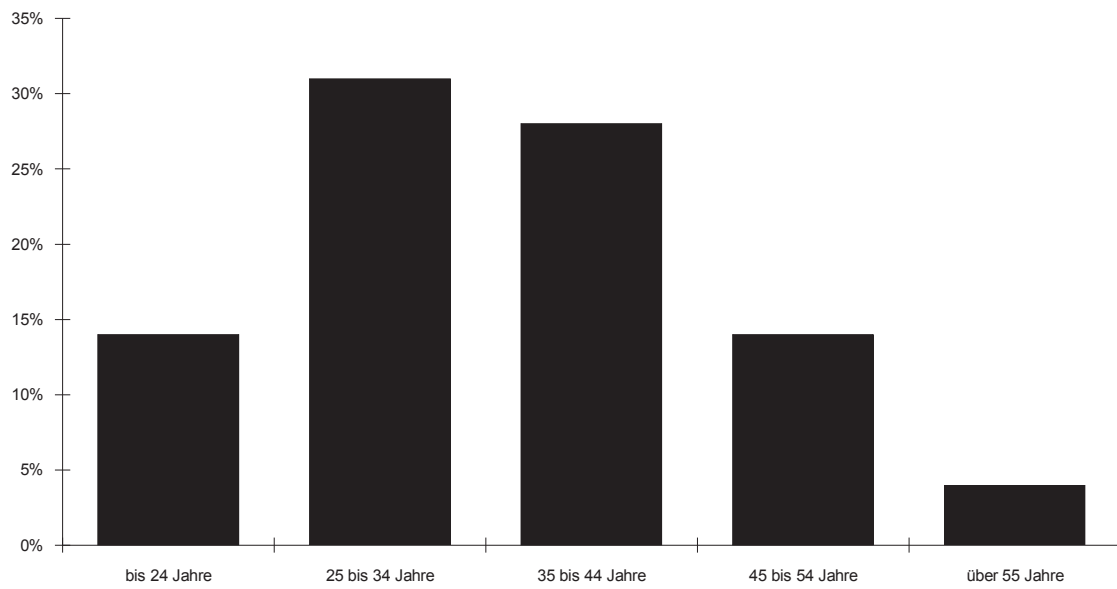


Diagramm 4: Beteiligung nach dem Lebensalter

Auch die Schulbildung der Teilnehmenden an Veranstaltungen zur Bildungsfreistellung wurde ermittelt, dabei wurden die nach DDR-Recht erreichten Schulabschlüsse den derzeit geltenden Abschlüssen zugeordnet. Den größten Anteil haben dabei diejenigen mit abgeschlossener Sekundarstufe I (36,7 %), den geringsten jene ohne Schulabschluß (0,2 %).

Teilnehmende 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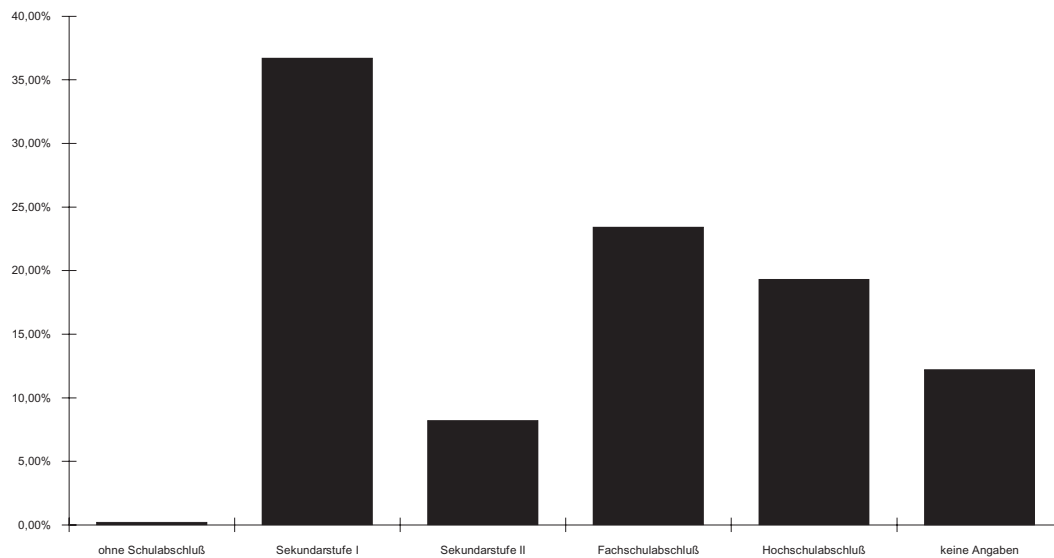


Diagramm 5: Beteiligung nach der Schulbildung

Einen Berufsabschluß haben 82 % der Teilnehmer, weitere 8 % befinden sich in einer Berufsausbildung, ohne Abschluß sind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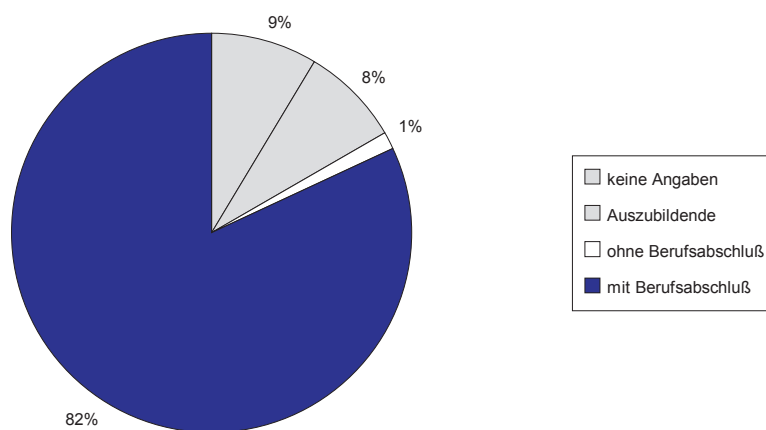


Diagramm 6: Beteiligung nach der Berufsausbildung

Schließlich wurde auch die Betriebsgröße als Faktor, der auf die Inanspruchnahme der Bildungsfreistellung Einfluß hat, ermittelt. Es zeigt sich, daß Betriebe mit mehr als 100 Beschäftigten den größten Teilnehmeranteil stellen.

Teilnehmende 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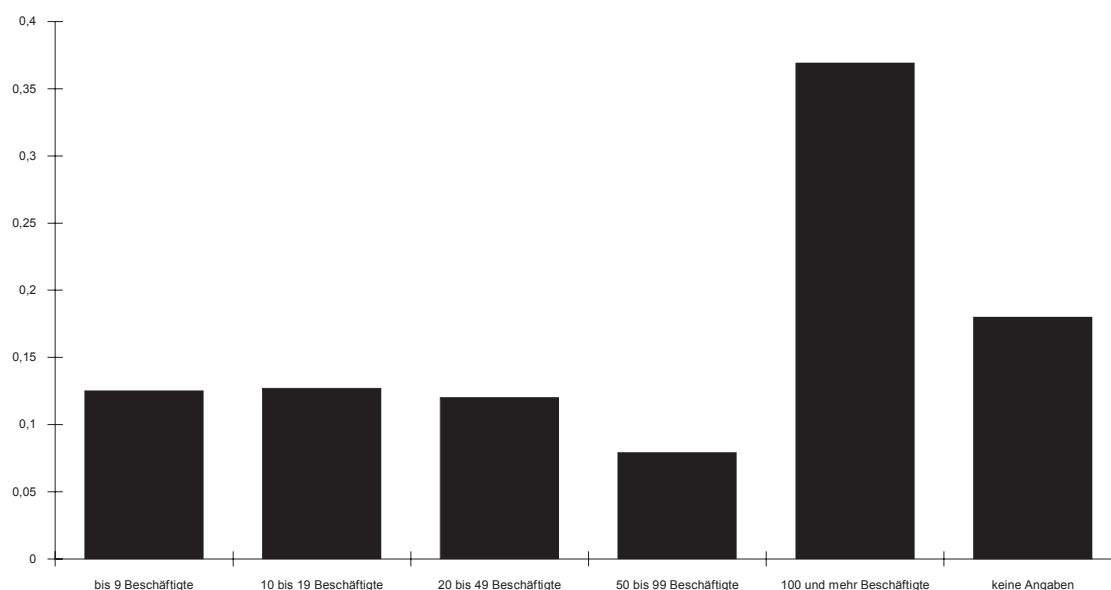


Diagramm 7: Beteiligung nach der Betriebsgröße

Auch künftig ist die Bildungsfreistellung durch weitere Informationen zu fördern. Zu diesem Zweck hat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bisher

1. im Dezember 1995 ein Leporello als Wegweiser zur Bildungsfreistellung veröffentlicht,
2. im Rahmen von Modellprojekten die Herausgabe der Broschüren
  - "Bildungsfreistellung", herausgegeben von der Landesarbeitsgemeinschaft für politisch-kulturelle Weiterbildung, die sich insbesondere an Veranstalter richtet, und

- "Fünf Tage, die den Kopf verändern - Bildungsfreistellung im Land Brandenburg", herausgegeben von der La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und Leben - DGB/VHS" - Arbeitsgemeinschaft für politische und soziale Bildung im Land Brandenburg e. V., Potsdam, die sich insbesondere an Interessentinnen und Interessenten richtet, gefördert,
3. im Oktober 1996 das Veranstaltungs- und Veranstalterverzeichnis "Bildungsfreistellung: Wer? Was? Wo? Wann? - Adressen der Veranstalter und Veranstaltungsverzeichnis" herausgegeben.

## **9. Schulabschlußbezogene Weiterbildung von Erwachsenen**

### **9.1. Zweiter Bildungsweg (Volkshochschulen, Abendschulen, Kollegs)**

Mit dem Begriff "Zweiter Bildungsweg" wird der Bildungsbereich definiert, der neben dem Regelschulbereich zu allgemeinbildenden schulischen Abschlüssen führt. Der Zweite Bildungsweg richtet sich an Erwachsene und setzt deren berufliche Erfahrungen und Tätigkeiten voraus. Ausgehend von der Philosophie des lebenslangen Lernens stellt die schulabschlußbezogene Weiterbildung einen unverzichtbaren Beitrag zur Verwirklichung von Chancengleichheit und der Erlangung höherer schulischer Qualifikationen dar.

Mit dem Aufbau des neuen Bildungssystems wurde im Land Brandenburg di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en Zweiten Bildungsweg im Sinne dieser schulabschlußbezogenen Weiterbildung für Erwachsene geschaffen. Dabei wurde an die organisatorischen Traditionslinien des Zweiten Bildungsweges der DDR angeknüpft. In der DDR wurden allgemeinbildende schulische Lehrgänge für Erwachsene an den Volkshochschulen angeboten. Das Brandenburgische Schulgesetz und das Brandenburgische Weiterbildungsgesetz bilden die gesetzlichen Grundlagen für den Zweiten Bildungsweg.

Aufgrund der Besonderheiten des Flächenlandes wurde im Land Brandenburg eine flexible Struktur des Zweiten Bildungsweges geschaffen, in der die nach 1991 kommunalisierten Volkshochschulen als traditionelle Zentren der Weiterbildung ebenso Berücksichtigung finden wie die eigenständig errichteten Abendschulen und Kollegs. Der Zweite Bildungsweg umfaßt die bundesweit anerkannten Bildungsgänge zum nachträglichen Erwerb der Fachoberschulreife, in dem auch die Berufsbildungsreife und die erweiterte Berufsbildungsreife erworben werden können, und zum Erwerb der allgemeinen Hochschulreife. Seit dem Schuljahr 1994/95 besteht auch die Möglichkeit der Erlangung des auf das Land Brandenburg beschränkten schulischen

- Qualität in der Weiterbildung,
- Volkshochschule zwischen Wettbewerb und öffentlicher Verantwortung,
- Fremdsprachen und Weiterbildung in Kooperation mit der Konzentrierten Aktion Weiterbildung (KAW),
- Weiterbildung für Menschen im Vorruhestand und ältere Arbeitslose in Kooperation mit der Konzentrierten Aktion Weiterbildung (KAW).

Das PLIB gibt seit 1992 den "Info-Dienst Weiterbildung in Brandenburg" heraus. Er bietet Informationen über die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und die Weiterbildung in anderen Bundesländern; er ist außerdem ein Forum zur Selbstdarstellung der Einrichtungen und Landesorganisationen. Bisher sind 8 Ausgaben erschienen. In Schwerpunktheften wurden beispielsweise Fragen 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oder das Verhältnis zwischen Deutschland und Polen als Themen von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in den Mittelpunkt gestellt. Die Service-Funktion des Info-Dienstes wird regelmäßig durch den Abdruck rechtlicher Regelungen, z. B. auch in Form einer Beilage, oder aktueller, aber schwer zugänglicher Diskussionspapiere wahrgenommen.

## **12. Finanziell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durch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ie im Einzelplan 05 Kapitel 05 710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mit Inkrafttreten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eingestellten Haushaltsmittel beliefen sich

- im Jahr 1994 auf 6.206.100 DM
- im Jahr 1995 auf 6.306.100 DM
- im Jahr 1996 auf 7.999.000 DM.

Diese Mittel beinhalten jeweils die Förderung der Grundversorgung, der anerkannten Landesorganisationen und anerkannten Heimbildungsstätten sowie der Modellvorhaben mit aktueller Schwerpunktsetzung. Bezuschußt werden Personal- und Sachkosten. Seit 1996 sind auch Entschädigungen für ehrenamtliche Mitglieder des Landesbeirates für Weiterbildung berücksichtigt. Pro Einwohner wendet das Land für die Weiterbildung auf gesetzlicher Grundlage im Jahr 1994 2,07 DM, im Jahr 1995 2,10 DM und im Jahr 1996 2,70 DM auf.

Gemäß der gesetzlichen Verpflichtung belief sich der Anteil zur Förderung der Grundversorgung in den Jahren 1994 und 1995 auf jeweils 4.906.000 DM. Dieser Summe liegt rechnerisch der sog. Grundversorgungsschlüssel zugrunde, der festschreibt, pro 40.000 Einwohner jeweils 2.400 Unterrichtsstunden durch das Land anteilig zu fördern. Durch Anhebung des Grundversorgungsschlüssels im Jahr 1996 (30.000 : 2.400) konnten die Ausgaben

für die Grundversorgung auf 6.334.000 DM gesteigert werden. Damit werden je geleisteter Stunde vom Land 31 DM gefördert. Veranstaltungen, denen eine Kooperation zugrundeliegt, werden ebenso wie Veranstaltungen, die der politischen Weiterbildung oder der Alphabetisierung zuzuordnen sind, mit 46,50 DM bzw. 62,- DM von seiten des Landes gefördert.

Für die Förderung der anerkannten Landesorganisationen, der anerkannten Heimbildungsstätten und für Modellvorhaben mit aktuellem Schwerpunktthema wurden 1994 532.354 DM, 1995 779.930 DM verausgabt und 1996 1.650 TDM veranschlagt. Die Förderung erfolgt jeweils auf der Grundlage von Richtlinien. Für kleinere Maßnahmen können auf Antrag Lottomittel gewährt werden.

Die Höhe der Teilnehmerentgelte wird durch di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für Einrichtungen in kommunaler Trägerschaft durch Beschlüsse der Kreistage bzw. Stadtverordnetenversammlungen festgelegt. Die übliche Spanne liegt derzeit bei ca. zwei bis vier DM pro Unterrichtsstunde, wobei besondere Aufwendungen, wie beispielsweise die Nutzung der EDV, in der Regel zu höheren Teilnehmergebühren führen. Ermäßigungen werden u. a. für Arbeitslose, Rentner und Sozialhilfeempfänger gewährt. Schulabschlußbezogene Lehrgänge des Zweiten Bildungsweges und Telekolleg II sind gebührenfrei.

### **13. Modellprojekte**

Nach § 27 Abs. 3 Nr. 3 BbgWBG können Modellvorhaben mit aktueller Schwerpunktsetzung durch das Land anteilig gefördert werden, wenn sie der Auseinandersetzung mit Themen dienen, die für das Land Brandenburg gegenwärtig von Bedeutung sind oder zur weiteren Entwicklung und Innovation der Weiterbildung im Land beitragen. Seit 1994 wurden insgesamt 10 Modellprojekte durch das Land gefördert:

Das Spektrum der Modellprojekte verdeutlicht das bildungspolitische Kernziel eines pluralen,

**Problemstellung/Zielstellung:** Die regionalen Tage der Weiterbildung haben zum Ziel, im Jahr des lebenslangen Lernens Brandenburgerinnen und Brandenburger auf Weiterbildungsangebote in ihren Kreisen mit den unterschiedlichsten Mitteln der Öffentlichkeitsarbeit aufmerksam zu machen und zwischen Anbietern und politisch Verantwortlichen einen Dialog über Chancen und Voraussetzungen lebenslangen Lernens zu initiieren.

**Umsetzung:** Die La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und Leben e. V. hat konzeptionelle und koordinierende Funktionen zur Vorbereitung der landesweiten regionalen Weiterbildungstage im Land Brandenburg übernommen und führt die Ergebnisse der unterschiedlichen regionalen Aktivitäten in einer zentralen Tagung Ende Oktober 1996 zusammen. Regionale Tage der Weiterbildung stellen im Land Brandenburg eine neue Form der Präsentation von Weiterbildung dar. Sie haben wegen der zu erwartenden Synergieeffekte einen besonderen Stellenwert.

**Laufzeit des Projektes:** 10.06.1996 bis 31.10.1996

**Landeszuschuß:** 31.511 DM

## **14. Weiterbildung in der Zuständigkeit weiterer Ressorts**

### **14.1. Berufli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MASGF)**

#### **14.1.1. Zur beschäftigungspolitischen Wirksamkeit von Qualifizierung**

Die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zugrundeliegende Qualifizierungspolitik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setzt an der individuellen Förderung von Arbeitslosen mit dem Ziel an, sie auf den Arbeitsmarkt zu vermitteln. Dabei wird von der Vorstellung ausgegangen, daß Qualifizierung von Arbeitslosen deren Chancen am Arbeitsmarkt erhöht. Dies spiegelt eine Grundannahme aus der Entstehungszeit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in den 60er Jahren wider: Im Prinzip herrscht Vollbeschäftigung, und Arbeitsplätze werden genügend angeboten, dem Arbeitslosen muß man nur ausreichend Hilfe anbieten z. B. in Form von Qualifizierung, dann kann er vermittelt werden. Diese Situation ist heute weder in Ost- noch in den West-Ländern gegeben.

Die Leistungen der Bundesanstalt, die sich überwiegend aus Versicherungsbeiträgen der Arbeitnehmer finanzieren, können sich nur an der individuellen Mangellage, also individuellen Qualifizierungsdefizit als Ursache der Arbeitslosigkeit orientieren. Die Hoffnung aber, daß die Qualifizierung den Arbeitslosen zu einem neuen Arbeitsplatz führt, ist inzwischen der ernüchternden Erkenntnis gewichen, daß allzuoft der Weg wieder zurück in die Arbeitslosigkeit

führt. Mittlerweile wird deshalb auch in den Arbeitsämtern stärker darauf geachtet, nur noch solche Qualifizierungsmaßnahmen zu fördern, die begründete Chancen eröffnen, anschließend in einen Arbeitsplatz einzumü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twa investorenorientierte Fortbildung.

Die Entwicklung der vergangenen Jahre zeigt einen starken Rückgang der Förderung von Fortbildung und Umschulung (FuU) durch die Arbeitsämt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fanden sich im August 1994 in Brandenburg noch 84.258 Personen im Verhältnis zu 171.440 arbeitslos gemeldeten Personen in von den Arbeitsämtern geförderten FuU-Maßnahmen, so waren es im August 1995 bereits nur noch 34.341 Personen im Verhältnis zu 164.166 arbeitslos gemeldeten Personen. Der Berichtsmonat Juli 1996 weist einen leichten Anstieg der in FuU-Maßnahmen befindlichen Personen auf 38.475 auf, bei jedoch zugleich deutlich höherer Arbeitslosenzahl von 182.829 Personen im Land Brandenburg. Die Entwicklung zeigt einen Trend zur Reduzierung von FuU-Maßnahmen und damit den Abschied von der Annahme, Qualifizierung allein könne die Vermittlung am Arbeitsmarkt bewirken.

Vor diesem Hintergrund ist zu fragen, wie öffentlich geförderte Qualifizierung, insbesondere in der Situation des Landes Brandenburg, besser als bislang beschäftigungswirksam werden kann. Nach allen Untersuchungen und inzwischen erreichten Erkenntnissen bedeutet dies eine grundsätzliche Verschiebung im Ansatz der Qualifizierungspolitik: Statt mit der Qualifizierung zu warten, bis die Menschen den Tatbestand der Arbeitslosigkeit erfüllen, muß eine beschäftigungsorientierte und wirtschaftsnahe Qualifizierung vorrangig bei den noch oder wieder Beschäftigten ansetzen.

Im Arbeitsministerium wurde dafür ein Konzept "wirtschaftsnaher Qualifizierung" entwickelt. Ergänzend dazu werden Modelle zielgruppenorientierter Qualifizierung durchgeführt, die der Ausgrenzung von am Arbeitsmarkt Benachteiligten entgegenwirken sollen.

#### **14.1.2. Arbeitsfelder wirtschaftsnaher Qualifizierung im Land Brandenburg**

##### **14.1.2.1. Qualifizierung i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KMU) werden erhebliche Beschäftigungsimpulse zugeschrieben. Der Vorteil der KMU, zumal wenn es sich um Neugründungen handelt, liegt in ihrer Reagibilität und Flexibilität auf neue Marktanforderungen. Diesen Vorteil können sie aber nur unter drei Voraussetzungen ausschöpfen: (1) mit modernen Produktionsanlagen, (2) mit kundenorientierten Dienstleistungen und (3) mit sachgerechter Qualifizierung.

Mit der Förderung der Qualifizierung werden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Betriebe verbessert, Arbeitsplätze stabilisiert und im weiteren Verlauf auch neue Arbeitsplätze geschaffen.

Seit 1992 wurden landesweit ca. 34.800 TeilnehmerInnen mit Hilfe des Förderprogramms qualifiziert. Dabei betrug der durchschnittliche Fördersatz 1.300 DM/TeilnehmerIn. Bisher dominierten die Qualifizierungsinhalte in den Bereichen "Büro/Verwaltung" und "Bau- und Baunebengewerbe" mit nahezu 50 % aller geförderten Qualifizierungsmaßnahmen. Die Bereiche "Management, Marketing und Organisation" waren demgegenüber verhältnismäßig unterrepräsentiert. Seit 1996 wird durch die Festlegung von Förderschwerpunkten in der entsprechenden Förderrichtlinie ein besonderer Akzent auf Qualifizierung im Bereich Marketing und Managementaufgaben, Liquiditätsvorsorge und Einsatz neuer Technologien gelegt. Landwirtschaftliche Betriebe werden im Rahmen der KMU-Förderrichtlinie in enger Abstimmung mit dem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gefördert.

#### **14.1.2.2. Projektförderung für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Soweit die in der KMU-Standardförderung vorgesehenen Förderkonditionen nicht ausreichen, sind in Einzelfällen modellhafte Projektförderungen für die Qualifizierung in KMU aus ESF-Mitteln möglich. Als ein aktuelles Beispiel ist das Managementtraining "System-Expert" zu nennen, das in Zusammenarbeit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 Cottbus und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Mittelstandsberatung mbH durch das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MASGF) im Kammerbezirk Cottbus gefördert wurde.

Weitere Beispiele sind die begleitende Qualifizierung der Beschäftigten einzelner Unternehmen bei der Einführung neuer Produkte und/oder neuer Fertigungstechnologien, etwa im Zusammenwirken mit einer Förderung neuer Technologien durch T.IN.A GmbH.

Weitere Fördermöglichkeiten für KMU in der Form innovativer Einzelprojekte bieten sich im Rahmen der EU-Gemeinschaftsinitiative ADAPT, die in herausragender Weise auf die Vermittlung von Fach- und Schlüsselqualifikationen zur Anpassung der ArbeitnehmerInnen an den beschleunigten gesellschaftlichen und industriellen Wandel abstellt.

#### **14.1.2.3. Förderung der Existenzgründung aus Arbeitslosigkeit**

Die Bildung einer vielschichtigen klei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sstruktur ist grundlegende Voraussetzung einer stabil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Kleine und mittlere

Betriebe tragen maßgeblich zur Schaffung und Erhaltung von Arbeitsplätzen bei. Zugleich kann aber auch die Existenzgründung für viele Menschen eine Perspektive aus der Arbeitslosigkeit und damit einen selbstgeschaffenen Arbeitsplatz bieten. Entscheidend für eine erfolgreiche Gründung ist es, daß die vorhandenen Gründungskonzepte durch geeignete, auf das Gründungsvorhaben zugeschnittene Qualifizierung vorbereitet und mit einer erfahrenen Beratung verzahnt werden. Die Zahl der bereits im 1. Gründungsjahr scheiternden Betriebe zeigt deutlich, daß neben der geringen Kapitaldecke die mangelhafte Vorbereitung, das fehlende Wissen und die reduzierte Bereitschaft, sich beraten zu lassen, mit dazu beigetragen haben, das Überleben der selbständigen Existenzen zu gefährden.

Mit dem Förderprogramm des MASGF wurden seit 1991 ein Zuschuß für Unterhaltskosten und ab 1993 zusätzlich die Inanspruchnahme von Beratungsleistungen und Qualifizierung gefördert. Seit 1993 wurden so ca. 5.500 ExistenzgründerInnen gefördert, von denen etwa ein Drittel Fördermittel für Beratung und Qualifizierung eingesetzt haben.

#### **14.1.2.4. Marktorientierte ESF-Projektförderung**

Der Arbeitsmarkt stellt sich als relativ unflexibel und schwerfällig dar. Es muß daher die Aufgabe von arbeitsmarktpolitischen Projekten sein, im Rahmen von innovativen Konzeptionen mit Unterstützung durch Qualifizierung erwerbswirtschaftliche Arbeitsplätze zu entwickeln. Aus diesem Grunde wurde eine Projektförderung konzipiert, die kein starres Förderkonzept vorgibt, sondern neuen Ideen die Chance zur Realisierung gibt.

Es handelt sich um eine Projektförderung, die größtenteils aus Mitteln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ESF) und zum geringeren Teil aus Landesmitteln gewährt wird.

Im Dialog mit dem Träger werden die Projektinhalte so ausformuliert, daß ggf. Marktchancen erkennbar und realisierbar werden. Die Projektfinanzierung - in den vom ESF gesteckten Grenzen - soll das Projekt insgesamt formen helfen: Qualifizierung der TeilnehmerInnen und des Managements, angemessene sächliche Ausstattung, begleitende Beratung. Dies erfordert eine Begleitung der Projekte nicht nur in der Antragsphase, sondern auch im Projektverlauf. Von Standardförderprogrammen unterscheidet sich diese Förderung insbesondere durch das "Dialogprinzip". Das heißt, hier werden keine fertigen Anträge geprüft und beschieden, sondern der Zuwendungsgeber stellt eine Infrastruktur als Dienstleistung zur Verfügung, um gemeinsam mit den Projektinitiatoren Ideen umsetzungsreif zu machen. Einfließen sollen z. B. regional- und branchenspezifische Informationen, betriebswirtschaftliches Know-how, Kenntnis über spezifische Förderprogramme und Antragstechniken.

Die inhaltliche Orientierung der Projekte basiert auf den Schwerpunkten des "Operationellen Programms"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ESF) und den damit gekoppelten landespolitischen



Zielsetzungen:

- \* Unternehmensgründung aus der Arbeitslosigkeit.
- \* Förderung von Produkt- und Verfahrensinnovationen und der technologischen Entwicklung in bestehenden Unternehmen.
- \* Verbesserung der beruflichen Integrationschancen von am Arbeitsmarkt besonders schwer vermittelbaren Personen, insbesondere Jugendlichen, Langzeitarbeitslosen, AusländerInnen, älteren Menschen im Alter von 45 und höher.
- \* Vermittlung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und Umsetzung innovativer arbeitsorganisatorischer Konzepte, z. B. in Verbindung mit neuen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en.

#### 14.1.3. Zielgruppenorientierte Qualifizierung

Ein herausragendes Beispiel für eine zielgruppenorientierte Qualifizierung ist das im Arbeitsministerium entwickelte "**Kurssystem contra Langzeitarbeitslosigkeit**".

Die Zielsetzung ist in erster Linie die Orientierung auf einen Arbeitsplatz; darüber hinaus die Entwicklung individueller neuer Perspektiven generell.

Das Kurssystem richtet sich an freiwillige TeilnehmerInnen, die mindestens seit 12 Monaten arbeitslos sind. Die stufenweise Einführung des Kurssystems begann am 06.12.1993 an vier Orten im Land Brandenburg. Zur Zeit operiert das Kurssystem landesweit an 22 Orten einschließlich "Filialen". Für die einzelnen TeilnehmerInnen erstreckt sich das Kurssystem über einen rd. sechsmonatigen Zeitraum. Dabei folgen jeweils sechs einwöchige Kurszeiten und fünf jeweils dreiwöchige Initiativphasen entsprechend aufeinander. Pro Kursort werden pro Woche 36 Personen einbezogen, im halben Jahr 144 Personen. So kann während eines Jahres mehr als 5.000 Personen eine Teilnahme ermöglicht werden.

Ziel des Kurssystems ist es, die Betroffenen zu stabilisieren und ihnen Aktivierungsimpulse zu vermitteln. Sie sollen Informationen, Beratungen, praktische Hilfen und praktische Herausforderungen - etwa auch in Übungswerkstätten und -büros - erfahren. Es soll ihnen bei ihren Bemühungen um berufliche Wiedereingliederung geholfen werden. Das Kurssystem soll für die TeilnehmerInnen Übergänge in verschiedene Aktivitäten schaffen. Dabei ist es durchaus im Sinne der Konzeption, daß solche Übergänge aus der laufenden Teilnahme am Kurssystem erfolgen - je nach konkreter persönlicher Chance. Angestrebt werden:

- Übergänge in unbefristete Arbeitsverhältnisse,

- Übergänge in befristete Arbeitsverhältnisse, in ABM, in Maßnahmen nach § 249h AFG und Projekte,
- Übergänge in weiterführende Qualifizierungsmaßnahmen/Fortbildungen und Umschulungen,
- ggf. Übergänge in ehrenamtliche Tätigkeiten, Vereinstätigkeiten etc.,
- als aktiver Grundeffekt der Kurssystem-Teilnahme eine Stärkung von Selbsthilfemotivationen und Handlungskompetenzen.

Eine erfolgreiche Durchführung des Kurssystems "lebt" zu einem erheblichen Teil von der Kooperationsbereitschaft verschiedener einschlägiger regionaler Akteure und Partner.

Zu den Kooperationspartnern gehören u. a.:

Industrie- und Handelskammer, Wirtschaftsförderung, Unternehmerverband, Arbeitsamt, Arbeitslosenzentren, Kulturvereine, Demokratischer Frauenbund, Stadtverwaltung, Sozialamt, Arbeitsförderungsgesellschaften, Presse.

Diesen Kooperationspartnern kommt eine indirekte "Mitträgerschaft" am Kurssystem zu. Beginnend mit seiner jeweiligen lokal-regionalen Einführung stärkt das Kurssystem regionale Kooperationsstrukturen. Die Pilotphase hat gezeigt, daß hier wichtige Fortschritte möglich sind. So gelang es z. B. in einer Region, einen festen Kooperationsverbund einer Vielzahl von Bildungs- und Beschäftigungsträgern zu installieren, der u. a. gemeinsame Projekte initiieren soll, die für TeilnehmerInnen des Kurssystems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bieten.

Statistische Angaben\* zur Durchführung des Kurssystems (Stand: 31.05.1996):

TN insg.	Ausstiege positiv								Sonstige Ausstiege	
	reguläre Arb.- Plätze	Exi.- Grü.	öff.gefö rd. Arb.- Plätze	FuU	Feststell.- Maßn.	ehrena mtl. Tätigk eit	Summe	in %	Krankheit / Umzug	Abbrü che
12.317	1.504	34	1.280	1.741	258	220	4.817**	39,1	581	354

\* vorläufige Angaben, da noch eine Reihe von Maßnahmen läuft

\*\* Summe ohne ehrenamtliche Tätigkeit

Von insgesamt 12.317 TeilnehmerInnen haben fast 40 % während oder nach der Maßnahme für sich eine neue Perspektive entwickeln können. Immerhin noch 12 % der TeilnehmerInnen fanden den Einstieg in einen regulären Arbeitsplatz.

Ein weiteres Beispiel ist die **“Akademie 2. Lebenshälfte”**. Sie ist ein Projekt mit innovativem Zuschnitt und Modellcharakter an ausgewählten Standorten des Landes Brandenburg. Sie ist charakterisiert durch die Verbindung von Sozialarbeit mit Bildungsarbeit (berufliche und allgemeine Weiterbildung), praktischer Arbeit in Werkstätten sowie arbeitsmarktlicher Orientierung. Die TeilnehmerInnen münden häufig in Projekte ein und haben unter Umständen wieder eine Chance, in das reguläre Arbeitsleben zurückzukehren. Das Angebotsprofil der **“Akademie 2. Lebenshälfte”** ist ganz besonders auf die Gruppe der älteren Arbeitslosen ab 45 Jahre zugeschnitten. Die Akademie genießt hohe Akzeptanz, nicht zuletzt bei den Arbeitsämtern.

#### **14.1.4.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Im Jahre 1992 wurden fünf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im Land Brandenburg eingerichtet. Die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sind durch die direkte Anbindung an die Landesagentur für Struktur und Arbeit Brandenburg GmbH (LASA) und das MASGF an der aktiven Umsetzung der Arbeitsmarktpolitik beteiligt.

Die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sind mit Sitz in Fürstenwalde, Potsdam, Lauchhammer, Rathenow und Templin gemäß den bestehenden fünf Arbeitsamtsbezirken Brandenburgs auf das Land verteilt. Für den Arbeitsamtsbezirk Frankfurt (Oder) wurde darüber hinaus eine Außenstelle in Frankfurt (Oder) eingerichtet. Die Zuständigkeiten und Verantwortlichkeiten der einzelnen BeraterInnen sind nach Landkreisen untergliedert. Damit haben jede Beraterin und jeder Berater die Aufgabe, Kontakte zu allen a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beteiligten Stellen in der Region herzustellen mit dem Ziel, ein flächendeckendes Kommunikationsnetz aufzubauen, das als Plattform regionaler Kooperationen und Aktivitäten dient und Impulse zur Entwickl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leistet.

Um eine flächendeckende Weiterbildungsberatung im Land Brandenburg anbieten zu können, wird der Beratungsservice auch außerhalb der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durchgeführt. Die Zusammenarbeit mit den Arbeitslosenzentren, Kreisverwaltungen etc. ermöglichte in allen Städten und größeren Orten des Landes das Angebot sogenannter **Vor-Ort-Beratung**, das aufgrund der kostenlosen Raumnutzung bei den Vor-Ort-Partnern zu einem bedarfsgerechten landesweiten Beratungsservice führte.

In den sehr schwachstrukturierten ländlichen Regionen der Uckermark und im Landkreis Barnim wird darüber hinaus die **mobile Beratung** angeboten. Mit einem Weiterbildungsbus touren die BeraterInnen von Dorf zu Dorf und bieten hier ihre Informations- und Beratungsdienste an. Durch das Zusammenwirken von stationärer Weiterbildungsberatung, Vor-Ort-Beratung und mobiler Beratung konnten bislang 92 Standorte im Land Brandenburg aufgebaut werden.

Seit Bestehen der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wurden über 45.000 Informations- und Beratungsgespräche geführt, davon ca. 60 % in den Stellen (stationäre Beratung) und ca. 40 % vor Ort und mobil.

Aufgrund des Informationsaustausches mit den Arbeitsämtern sind die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in der Lage, Kenntnis über kurzfristig bewilligte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zu erhalten und die Weiterbildungsberatung effektiv zu gestalten. Die intensive Beratungsmöglichkeit der Informations- und Beratungsstellen wird von den Arbeitsämtern immer häufiger als eigene Arbeitsentlastung begriffen und in Anspruch genommen.

Des weiteren werden Informationsveranstaltungen und Gespräche am Runden Tisch zwischen den regionalen arbeitsmarktpolitischen Akteuren organisiert, um z. B. aufgrund von Entlassungen oder bei auslaufenden ABM- und § 249h-Projekten Ideen und Initiativen zu entwickeln mit dem Ziel, sozialverträgliche Lösungen für die Betroffenen zu finden.

### **Weiterbildungsberatung und Weiterbildungsdatenbank**

Seit Anfang 1992 besteht die Weiterbildungsdatenbank Brandenburg, die ab Juli 1993 auch durch die LASA Brandenburg GmbH bearbeitet wird. Die Datenbank enthält ca. 20.000 Angebote zur beruflichen Weiterbildung, die fortlaufend aktualisiert werden.

Um den Verbraucherschutz gewährleisten zu können, ist eine wesentliche Aufgabe von Weiterbildungsberatung, den Weiterbildungsinteressierten auf Kriterien zur Vergleichbarkeit der Angebote aufmerksam zu machen und Bewußtsein für das Preis-/Leistungsverhältnis zu vermitteln. Zu diesem Zweck werden den Ratsuchenden alle für sie in Frage kommenden Weiterbildungsangebote als Computerausdruck zur Verfügung gestellt. Die Prüfung der Angebote und die Auswahl trifft der einzelne selber, die Anleitung zur Prüfung leistet die Weiterbildungsberatung.

Das Informations- und Beratungsangebot:

- Kostenlose, anonyme und trägerneutrale Individualberatung zu Frag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 Recherchen über Qualifizierungsmöglichkeiten (Fortbildung, Umschulung, berufsbegleitende Kurse, Direkt- und Fernstudium, Lehrgänge allgemeiner Weiterbildung),
- Zusammenstellung von konkreten Weiterbildungsangeboten mit Hilfe der Weiterbildungsdatenbank Brandenburg,
- Bewerbungshilfen und Bewerbungstraining,
- Hinweise zur Förderung nach dem Landesprogramm “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
- Hilfen bei der Antragstellung auf Landesförderung,
- Information zur Bildungsfreistellung nach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 Unterstützung bei der Berufsorientierung von SchulabgängerInnen,
- Beratung zum 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 (AFBG),
- Weiterbildungsberatung von KMU, Arbeitsförderungs- und Arbeits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etc. (Ermittlung von Qualifizierungsbedarf, Erarbeitung von konkreten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Unterstützung bei der Konzipierung firmeninterner Schulungen),
- Beratung von Bildungsträgern: Beurteilung von Qualifizierungskonzepten, Unterstützung bei der Konzipierung neuer Weiterbildungsmaßnahm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regionalen Arbeits- und Bildungsmarktes.

## **14.2. Politis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LZpB)**

### **14.2.1. Allgemeine Grundsätze der Arbeit der Brandenburg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Mit der Errichtung ein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nüpft das Land Brandenburg an

die in Bund und Ländern geübte Praxis der staatlichen Förderung politischer Bildungsarbeit an. Neben den Angeboten der Landeszentrale sind es vor allem die freien Träger politischer Bildung, die Bürgerinnen und Bürgern in einer noch nicht ausgeprägten Verbände- und Parteienlandschaft Zugang zu Informationen und Diskussionen über politische Fragestellungen ermöglichen. Die Teilnahme am politischen Willensbildungsprozeß und die Verwirklichung des Rechtes auf politische Mitgestaltung nach Artikel 21 der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erfordern neben der Fähigkeit zum selbstbestimmten Urteilen vor allem Möglichkeiten, die Beteiligung an Politik einzuüben. Im Blick auf dieses Ziel ist unter politischer Bildung mehr als die Vermittlung von politischem Sachwissen zu verstehen. Die öffentlichen Angebote der freien Träger politischer Bildung, die von der Landeszentrale gefördert werden, sind ein wichtiges Element der demokratischen politischen Kultur und ein Beitrag für die zu stärkende Teilnahme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an demokratischer politischer Praxis.

Nach den Grundsätzen freiheitlich-demokratischer politischer Bildung ist ein Kriterium für die Förderung von Projekten und Veranstaltungen, daß diese nicht durch einseitige Informationen bzw. parteipolitische Instrumentalisierung gekennzeichnet sind. Politische Bildungsveranstaltungen sollten die Verschiedenheiten der Sichtweisen zu einem Problem darstellen. Da dies im Einzelfall nicht immer gelingen kann und vor allem die Einbeziehung engagierter Vertreter einer Sache ausschließen würde, muß letztlich die Gewährleistung einer Pluralität von Angeboten durch eine Vielfalt freier Träger diesem Grundsatz Rechnung tragen.

Die Angebote der Brandenburg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 Form von Seminaren, Konferenzen, Publikationen und politisch engagierten künstlerischen Produktionen richten sich vornehmlich an die Zielgruppe der sogenannten Multiplikatoren politischer Bildung, also an beruflich oder ehrenamtlich engagierte Personen, Betroffene und Verantwortliche im Bereich des jeweils thematisierten gesellschaftlichen Problemfeldes.

In der Aufbauphase politischer Bildung im Land Brandenburg lag der Schwerpunkt der Arbeit der BLZpB darin, Angebote von Politikvermittlung und den Aufbau und die Förderung einer freien Trägerlandschaft zu entwickeln.

Beim Aufbau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m Land Brandenburg wurden wichtige Erfahrungen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vorwiegend NRW, berücksichtigt. Hinsichtlich der Zielgruppen politischer Bildung waren jedoch abweichend von westdeutschen Gewohnheiten die Transformationserfahrungen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im Osten zu berücksichtigen und aufzunehmen. Die Erfahrungen individueller und kollektiver Brüche von Biographien, die Verarbeitung neuer Rahmenbedingungen in Arbeits- und Alltagswelt sowie die Notwendigkeit, sich in einem neuen politischen System zu orientieren, spiegeln seit 1991 vielfältige eigene konzeptionelle Ansätze der politischen Bildung der BLZpB wider.

Ziel war, die Angebote der politischen Bildung möglichst authentisch der jeweiligen Lebensgeschichte und politischen Erfahrungsgeschichte entsprechend zu vermitteln. Von herausragender Bedeutung waren insofern Themen der Geschichtsaufarbeitung, der Landesidentität und der gegenwärtigen gesellschaftlichen Transformationserfahrung.

## **14.2.2. Förderung**

### **14.2.2.1. Zuwendungen für Maßnahmen der politischen Bildung**

Für die BLZpB ist die Gewährung finanzieller Zuschüsse für Maßnahmen der politischen Bildung vorrangig im Sinne der vom Gesetzgeber übertragenen Verantwortung. Sie ist das entscheidende Instrument zur Förderung eines neu zu schaffenden politisch-pluralen, dezentralen und bürgernahen Angebots politischer Bildung in Brandenburg. Auf der Grundlage eines Jahresarbeitsprogramms werden Einzelprojekte von freien Trägern der politischen Bildung durch Mittel des Landes Brandenburg gefördert. Darüber hinaus werden Zuschüsse für die politische Bildungsarbeit der den Parteien nahestehenden Stiftungen und kommunalpolitischen Vereinigungen gewährt. Von insgesamt 7,2 Mio DM Haushaltsvolumen 1996 werden der BLZpB für die Förderung insgesamt 5.340 TDM zur Verfügung gestellt. Schwerpunktmäßig werden 17 freie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2,5 Mio DM) und Einzelprojekte von 37 freien Trägern (0,3 Mio DM) gefördert.

Da auch im kommenden Jahr die Möglichkeit eines großzügigeren Fördervolumens für die Arbeit der politischen Bildungsträger nicht abzusehen ist, müssen Überlegungen angestellt werden, die Förderinstrumente so zu verändern, daß die Träger in die Lage versetzt werden, über andere Mittelgeber ihre Arbeit zusätzlich zu finanzieren. Dies setzt voraus, daß ihre prinzipielle Arbeitsfähigkeit gesichert wird, wozu Vorschläge für die Anpassung der Richtlinien und Förderinstrumente unterbreitet werden. Damit soll verhindert werden, daß die Existenz der Träger in Frage gestellt wird.

Die Förderinstrumente des Landes sind so anzupassen, daß sie den Trägern ermöglichen, Bundes- sowie EU-Mittel zu akquirieren.

### **14.2.3. Trägerprofile**

Unter den von der BLZpB geförderten und von Anfang an begleiteten Trägern haben sich die nachfolgend aufgeführten wichtigsten Formen von Trägerprofilen herausgebildet:

- 1) Initiativen, in denen politisch engagierte Bürger zumeist aus der Bürgerbewegung mittels der Bildungsarbeit Öffentlichkeit für Themen der Geschichte und des Alltags herstellen;

- 2) Neugründungen von Bildungsträgern in Anlehnung an westdeutsche Erfahrungen mit Bindung an überregionale Verbandsstrukturen;
- 3) Neugründungen von traditionellen ostdeutschen Bildungsstrukturen der Erwachsenenbildung (z. B. Urania e. V., Kulturbund e. V.);
- 4) Träger der internationalen, insbesondere europapolitischen und deutsch-polnischen Bildungs- und Begegnungsarbeit.

#### **14.2.4. Die Bedeutung des Gesetzes zur Regel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für freie Träger politischer Bildung im Lande Brandenburg**

Das Brandenburgische Weiterbildungsgesetz (BbgWBG) vom 15. Dezember 1993 eröffnet die Förderung von politischer Bildung durch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bildet in inhaltlicher und materieller Hinsicht Grundlage für die gesetzliche Anerkennung und Förderung von politischer Bildungsarbeit (vgl. § 1 Abs. 4 BbgWBG). Die Beteiligung der BLZpB erfolgt im Zusammenhang mit dem BbgWBG auch bei Anträgen zur Bildungsfreistellung von Beschäftigten (§ 14 Abs. 1), für anerkannte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zum Zwecke beruflicher, kultureller oder politischer Bildung.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ausdrücklich auch Veranstaltungen anerkennungsfähig, die von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gefördert werden.

Bei der Beurteilung der Anwendbarkeit des BbgWBG für die von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geförderten freien Träger ist insbesondere die Verordnung zur Grundversorgung und Förderung nach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vom 24. Juni 1994 (Weiterbildungsverordnung - WBV) von Bedeutung. Für die von der BLZpB geförderten freien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stellt die Erbringung des grundsätzlich vorgeschriebenen Eigenanteils von 50 % die größte Hürde nach der Anerkennung als Weiterbildungseinrichtung dar.

Im Jahre 1995 wurden von der BLZpB insgesamt 60 freie Träger mit Angeboten politischer Bildung gefördert. Davon waren 17 freie Träger, die ausschließlich oder überwiegend Maßnahmen der politischen Bildung durchführten. Die Anerkennung als Träger der Weiterbildung haben nach dem BbgWBG davon nur sieben politische Bildungsträger erreicht. Diese Träger haben potentiell die Möglichkeit, jährlich per Leistungsnachweis an der Grundversorgung teilzuhaben. Diese Teilhabe ist jedoch in nur einem Fall gegeben, wo die erforderlichen Voraussetzungen erbracht werden.



Das Leistungsprofil der von der BLZpB seit Anbeginn geförderten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ist derart, daß sie - mit Ausnahme eines zur Zeit nach dem BbgWBG anerkannten freien Trägers - personell, finanziell und logistisch nicht in der Lage sind,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wichtige Personalförderung zu erbringen. Die Anerkennung als Weiterbildungseinrichtung sagt somit noch nichts darüber aus, ob diese freien Träger auch die jährlich geprüften Voraussetzungen nach der Weiterbildungsverordnung erbringen können.

Damit erhält die Unterstützung dieser Träger und somit die Sicherung einer Trägervielfalt durch die BLZpB eine sehr wesentliche Funktion. Die Reduzierung der Ausreichung von Fördermitteln durch die BLZpB wirkt bei einer in der Regel zu geringen Eigenmittel- und Personalausstattung (u. a. durch Wegfall von ABM-Beschäftigten) sehr schnell existenzgefährdend. Die Möglichkeiten eines Ausgleichs von wegfallenden Fördermitteln durch andere Zuwendungsgeber sind in der überwiegenden Zahl der Fälle nicht gegeben.

#### **14.2.5. Operative Sachmittel**

Neben den für die Finanzierung einer thematisch und regional breit gestreuten Trägerlandschaft bereitstehenden Haushaltsmitteln setzt die Landeszentrale 765 TDM für ein umfassendes Spektrum eigener Aktivitäten ein, mit denen sie auf spezifische Weise die jeweiligen Zielgruppen erreichen will.

Mit diesen Mitteln erarbeitete die Landeszentrale eine Fülle eigener Angebote für Multiplikatoren und Interessenten politischer Bildung, für:

- a) Tagungen, Seminare, Lehrgänge, Pilotprojekte,
- b) Lehr- und Lernmittel, Eigenpublikationen und -produktionen,
- c) Literaturerwerb und Weitergabe an Dritte.

Mit dem Umzug in ein eigenes Haus auf dem Gelände der Landesregierung wird die BLZpB zum ersten Mal ein eigenes Standortprofil als Zentrum für politische, zeitgeschichtliche und kulturelle Themen entwickeln können. Als Ort der Kommunikation zwischen Regierenden und Regierten, zwischen Politik, Verwaltung und Gesellschaft wächst die Landeszentrale in die Funktionen einer Begegnungsstätte und Denkfabrik, eines Forums und einer Akademie, einer Werkstatt und Info-Börse hinein. Die Suche nach neuen Formen der Vermittlung politischer Inhalte mit dem Ziel, bei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die Kompetenz zu eigenverantwortlichem politischem Handeln zu stärken, erfordert ein neues institutionelles

Verständnis von politischer Bildung im Zusammenhang veränderter politischer Kommunikationsverhältnisse zu erproben und neue Adressaten anzusprechen.

#### **14.2.6. Bilanz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

##### **Die Bedeutung staatlicher Förderung für die Entwicklung einer demokratischen politischen Kultur unter sich ändernden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versteht ihren Auftrag insbesondere darin, den Aufbau und die Arbeit einer möglichst vielfältigen und bürgernahen Trägerlandschaft politischer Bildung als Ausdruck einer pluralistischen politischen Infrastruktur im Vorfeld der Arbeit von Parteien und Verbänden zu fördern. Sie leistet damit einen Beitrag zur Herausbildung und Festigung einer demokratischen politischen Kultur und setzt so zugleich Impulse für die Entwicklung neuer Formen kooperativer, in der Gesellschaft verankerter Politik.

Unter den Ursachen für die vielbeschriebene Krise der Einstellungen der Bürger zu den politischen Institutionen stellen das sich verändernde Partizipationsbedürfnis und -verhalten in bezug auf Organisationen, Parteien und Verbände eine neue Herausforderung für die Weiterentwicklung demokratischer Beteiligungsformen dar. Die Schlagworte "Bürgerdialog", "Runde Tische" und übergreifende "Bündnisse" für Problemlösungen signalisieren nicht etwa ein sinkendes Interesse an politischen Themen, sondern den Bedarf an neuen Politikformen mit größerer Offenheit und Zugangsfreiheit für den Bürger. Die Leistungsfähigkeit unserer politischen Kultur wird mehr und mehr daran gemessen werden, wie sie Veränderungen der gesellschaftlichen Kommunikation strukturell verarbeitet und sich den Erfordernissen verständigungsorientierter Lösungen öffnet.

D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ur wenig entfaltete Pluralität von Interessenverbänden, Bürgerinitiativen und Vereinen ist ein scheinbarer Vorteil für die Effizienz der professionellen Politik, insofern zunächst ein geringeres Maß an Verhandlungs- und Verständigungsaufgaben bei der Durchsetzung von Entscheidungen erforderlich ist. Schon heute wirkt sich diese strukturelle Schwäche nicht nur als gefährliche Abstinenz und Unwägbarkeit bei politischen Wahlentscheidungen und Volksabstimmungen aus, wie die Entscheidung zur Länderfusion Berlin-Brandenburg gezeigt hat. Ebenso gravierend sind zum Beispiel die Folgen schlecht ausgehandelter Entscheidungen auf der kommunalen Ebene, wo Bürgerbeteiligung und Interessenausgleich für viele Zukunftsinvestitionen gefordert sind.

Die Landeszentrale kann mit ihren Möglichkeiten einen Beitrag zur Behebung dieser Schwäche leisten, indem sie praxis- oder problembezogene Angebote für politische Diskurse unter Akteuren und Betroffenen organisiert. Dabei kann sie ihrem überparteilichen Auftrag gemäß

zwischen den Interessengruppen bzw. institutionellen Zuständigkeiten Verständigungsprozesse einleiten oder moderieren. Sie würde damit der verbreiteten Neigung zu elitären Lösungsmodellen, die sich in Expertenkulturen, Think Tanks und Fachgremien anbieten, ein breiteres, verständigungsorientiertes Modell entgegensetzen.

Eine weitere wichtige Herausforderung politischer Bildung ist mit dem Stichwort "Medienkompetenz" bezeichnet und erfordert die Entwicklung von medienpädagogischen Konzepten und Angeboten, die die politische Urteilsfähigkeit angesichts einer rasanten Entwicklung der Mediengesellschaft stärken.

Noch bedeutsamer dürften langfristig alle Ansätze zur Schaffung sozialer Orte politischer Gemeinschaftserfahrung sein. Der Bedarf für solche Erfahrung entspricht dem oben bereits benannten Formwandel des Partizipationsverhaltens und der Bürgertugend. Solche Orte werden künftig viel mehr als Familie, Kirche oder Parteien zu Räumen der Erfahrung des Politischen als Praxis der freien Verständigung über gemeinsame Belange. Bei der Herausbildung dieser neuen Formen zivil- oder bürgergesellschaftlichen Engagements können die auf Vereinsbasis organisierten freien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eine entscheidende Katalysator-Rolle spielen. Sie können als lokale oder regionale, klientel- oder interessenprägte freie Institutionen nicht nur Sachwissen vermitteln, sondern auf diesem Wege zugleich Organisations- und Handlungskompetenz für begrenzte Aufgaben vermitteln. Außerdem bieten viele dezentrale Bildungseinrichtungen auch für die Träger institutionalisierter Politik sowie für Mandatsträger und Entscheidungsträger in den Verwaltungen Diskussions- und Kommunikationsmöglichkeiten an, die nicht den Ritualen und Gesetzen medialer Kommunikation gehorchen.

Die Entwicklung und Sicherung einer möglichst breit gefächerten Infrastruktur freier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bedürfen allerdings unter diesen Gesichtspunkten einer Überprüfung der klassischen Kriterien und Anforderungen für die staatliche Förderung. Nicht ein Mehr an Zuwendungen, sondern eine Neuorientierung der Förderkriterien an den zu entwickelnden Formen politischer Bildung und Kommunikation ist erforderlich.

#### **14.2.7. Anpassung der Förderpraxis an das veränderte Rezeptionsverhalten der Zielgruppen und die zukünftigen Finanzierungsmöglichkeiten**

Politische Bildung organisiert sich im Westen aus einem Mechanismus der Nachfrageorientierung. Bildungsträger reagieren auf seit längerem erkennbares Nachfrageverhalten und bedienen klar umgrenzte und spezifische Klientelgruppen.

Im Osten arbeiten die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dagegen eher angebotsorientiert. Politische Bildung muß stärker als im Westen Angebote zum politischen Dialog unter schwierigen 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ohne die Sicherheit einer klaren Nachfrage unterbreiten in der

Hoffnung, dauerhaftes Interesse für die Arbeit zu binden. Die freien politischen Bildungsträger arbeiten daher unter erhöhten Risikobedingungen, denen in der Förderpolitik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bisher nur unzureichend Rechnung getragen werden konnte.

### **14.3. Kulturelle und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ltur (MWFK)**

#### **14.3.1. Kulturelle Weiterbildung**

Mit der Festschreibung der kulturellen Weiterbildung als einem der drei prioritären Weiterbildungsbereiche und der entsprechenden Aufnahme in das Weiterbildungsgesetz einschließlich der dazugehörigen Richtlinien und Verordnungen vertritt das Land Brandenburg eine sehr fortschrittliche Auffassung dazu, welche Bildungselemente in einer modernen Gesellschaft elementar sind.

Die nach zum Teil kontroverser Diskussion festgelegte begriffliche Bestimmung dessen, was nach dem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 anerkennungsfähige Inhalte kultureller Weiterbildung sein sollen und was nicht, hat sich im praktischen Umfang als sinnvoll und handhabbar erwiesen. Hierbei ist der insbesondere in der Bildungsfreistellungsverordnung sehr deutlich formulierte "Katalog" nichtanerkennungsfähiger Veranstaltungen hilfreich. Ausgeschlossen sind u. a. solche Veranstaltungen, die vorrangig dem Erlernen künstlerischer Techniken, der privaten Freizeitgestaltung und Erholung dienen. Demgegenüber sind hauptsächlich solche Inhalte anerkennungsfähig, die sich vor allem kulturgeschichtlich, kulturpolitisch, kunsttheoretisch auf die Vermittlung von Kenntnissen und die Ausprägung von Fähigkeiten für die aktive Auseinandersetzung sowohl mit der eigenen Kultur als auch mit fremden Kulturen beziehen.

Das MWFK wirkt auf Grundlage des Weiterbildungsgesetzes im Rahmen der fachlichen Beteiligung an den unter Federführung des MBS durchzuführenden Anerkennungsverfahren von Einrichtungen, Landesorganisationen sowie vo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mit. Diese Beteiligung konzentriert sich auf die inhaltliche Prüfung und Votierung der Trägerangebote für kulturelle Weiterbildung, zweckgebundene Fördermittel für die kulturelle Weiterbildung stehen dem MWFK nicht zur Verfügung. Die im Kulturhaushalt veranschlagten Mittel für kulturelle Bildung (und nicht Weiterbildung) dienen vorrangig der Förderung von Jugendkunstschulen, Kinder-Kreativ-Häusern und Projekten, die sich schwerpunktmäßig der Kinder- und Jugendkulturarbeit, der kulturpädagogischen Arbeit außerhalb von Schule und auch außerhalb von Weiterbildung widmen, was ein Schwerpunkt in der Kulturförderung, aber nicht Gegenstand des Weiterbildungsberichtes ist.

### 14.3.2.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Nach § 4 Absatz 4 des Brandenburgischen Hochschulgesetzes dienen die Hochschulen des Landes dem weiterbildenden Studium und beteiligen sich an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Entsprechend haben sich die brandenburgischen Hochschulen seit ihrer Gründung im Jahr 1992 neben ihrer Hauptaufgabe der Entwicklung und Durchführung grundständiger Studiengänge auch der wissenschaftlichen Weiterbildung zugewendet. Im Vordergrund standen:

- umfangreiche Maßnahmen zur Fortbildung der brandenburgischen Lehrerschaft, die vor allem durch das Pädagogische Landesinstitut Brandenburg (PLIB) und die Universität Potsdam durchgeführt wurden,
- Brückenkurse für Absolventinnen und Absolventen von Ingenieur- und Fachschulen der DDR, die zu einem anerkannten Fachhochschuldiplom führen,
- berufsbegleitendes Studium im Studiengang Sozialarbeit/Sozialpädagogik.

Der Auftrag der Hochschulen zur Technologieberatung und zum Wissenstransfer konkretisiert sich in allgemeinen bzw. themenbezogenen, ggf. auch firmenbezogenen Weiterbildungsaktivitäten. Dazu haben die Hochschulen mittlerweile eigene Weiterbildungseinrichtungen aufgebaut. Zu nennen sind:

Brandenburgische Technische Hochschule Cottbus:

Zentrale Betriebseinheit Weiterbildung der BTU

Gesellschaft für Innovationsförderung und Technologietransfer mbH an der BTU Cottbus (UniTec)

Europa-Universität Viadrina Frankfurt (Oder):

Fernstudienzentrum

Kooperationsprojekt Wissenschaft und Arbeitswelt an der EUV (kowa)

Universität Potsdam:

Weiterbildungszentrum der Universität Potsdam

"Weiterqualifizierung Brandenburger Lehrerinnen und Lehrer e. V."

Potsdamer Informations- und Technologietransfer (PITT)

FH Brandenburg:

Technologie- und Innovationsberatungsstelle der FH Brandenburg (TIBS)

FH Eberswalde:

Technologie- und Innovationsberatungsstelle der FH Eberswalde (TIB)

FH Lausitz:

Lausitzer Technologie Transferstelle (LAUTT)

FH Potsdam:

Wissens- und Technologietransfer der FH Potsdam (WiT)

Institut für Fortbildung, Forschung und Entwicklung e. V., Potsdam (IFFE)

Institut für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e. V. (IID)

TFH Wildau:

Technologietransfer- und Weiterbildungszentrum an TFH Wildau e. V. (TWW).

Das Weiterbildungsangebot wird aus den inhaltlichen Schwerpunkten der Hochschulen heraus entwickelt, mit d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Gewerkschaften und weiteren örtlichen Verbänden auf die regionalen Bedürfnisse hin abgestimmt und leiste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Modernisierung der regionalen Industrie- und Wirtschaftsstrukturen. Berufliche Weiterbildung findet in unterschiedlichen Formen statt: Zertifikatkurse, Fernstudienangebote, Lehrgänge, Schulungs- und Beratungsprogramme für Unternehmen, Behörden und Verbände, Fachtagungen, thematische Kolloquien, Einzelvorträge, Veranstaltungen und Ausstellungen zusammen mit Unternehmensverbänden etc.

Die brandenburgischen Hochschulen nehmen den Weiterbildungsauftrag des Brandenburgischen Hochschulgesetzes in eigener Verantwortung wahr. Sie legen Weiterbildungsprogramme vor und erstatten über die Durchführung ihrer Weiterbildungsaktivitäten dem MWFK Bericht.

#### **14.4. Weiterbildung im ländlichen Raum und berufliche Weiterbildung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MELF)**

Im Land Brandenburg ist das MASGF für die finanzielle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auch in der Landwirtschaft zuständig. Hier findet eine Abstimmung mit dem MELF insbesondere zu den Inhalten der förderbaren Maßnahmen statt. Da diese Förderung ab Mai/Juni 1995 reduziert werden mußte, standen den Bildungsträgern nur 816.830 DM

Fördermittel zur Verfügung. Erstmals sind 1995 zur weiteren Sicherung der bedarfsgerechten Weiterbildung durch das MELF die KULAP-Richtlinie (Richtlinie des 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übe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für die Weiterbildung vo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land- und forstwirtschaftlicher Betriebe auf dem Gebiet umweltgerechter Produktionsverfahren - vom 4. April 1995 -) mit einem Förderumfang von 278.650 DM und die Richtlinie zur Förderung der kommunalen Weiterbildungsträger nach § 18 Landwirtschaftsförderungsgesetz (Richtlinie des Ministeriums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über die Gewährung von Zuschüssen zur Förderung der Aus- und Weiterbildung im ländlichen Raum - vom 4. Mai 1995) mit einer Zuwendungssumme von 233.140 DM wirksam geworden. Dadurch sind 1995 insgesamt 1.328.620 DM für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bewilligt und ausgezahlt worden. Die Bildungsträger konnten bei der veränderten Fördersituation ihr Bildungsangebot dadurch weitestgehend realisieren.

Durch zunehmende "Marktzwänge" und immer komplizierter werdende Finanzierungsbedingungen wächst der Druck auf die Weiterbildungsträger. Das erfordert die Beteiligung an kooperativen Netzwerken mit unterschiedlich profilierten Akteuren dieser Bildungslandschaft sowie die Ausprägung der Fähigkeit, auf die neuen Anforderungen ohne Zeitverlust zu reagieren.

Dennoch zeichnen sich bei einzelnen Bildungsangeboten schon heute Schwierigkeiten ab, eine ausreichende Teilnehmerzahl zu gewinnen. Dies führt, neben den inhaltlichen Spezialisierungen von Bildungsträgern, bereits jetzt zu einer Vielzahl gemeinsamer Bildungsangebote und drückt sich in einer erhöhten Kooperationsbereitschaft der Bildungsträger im Agrarbereich aus. Mit der Gründung des "Landesverbandes für Weiterbildung im ländlichen Raum e. V." haben sie sich ein gemeinsames Sprachorgan und eine institutionelle Basis für die Verbesserung der Zusammenarbeit geschaffen. Im Rahmen eines mehrjährigen Projektes wird die Zielstellung des Verbandes und seiner Mitglieder mit EU- und Landesmitteln gefördert.

Trotz der umfangreichen und zum Teil neu geschaffenen Fördermöglichkeiten des Landes ist es in den vergangenen Jahren nicht gelungen, die Trägerstrukturen umfassend zu festigen. Die Tendenz zur Trägerkonzentration hält an. Da die Förderwege starken Veränderungen unterliegen und die Förderhöhe stark schwankt, besteht für die Bildungsträger oft geringe Planungssicherheit.

#### **14.4.1. Berufsbegleitende Weiterbildung für Beschäftigte im Agrarbereich**

Sowohl von kommunalen Einrichtungen, z. B. den vier Landwirtschaftsschulen und zwei Kreisvolkshochschulen, als auch von freien Bildungsträgern und den Lehr- und Versuchsanstalten wird den Beschäftigten im Agrarbereich (vom Facharbeiter bis zum Man-

ager) berufsbegleitende Weiterbildung angeboten. So haben die Landwirtschaftsschulen im Jahr 1995 für 3.089 Teilnehmende ein Unterrichtspensum von insgesamt 11.111 Stunden geleistet. Durch flexiblere Organisationsformen wurde fast allen Zielgruppen die Teilnahme ermöglicht; die Angebote wurden in Tagesveranstaltungen, Wochenkursen und Lehrgängen mit ein- bis zweijähriger Laufzeit entwickelt und in vielfältigen Kooperationsbeziehungen umgesetzt.

### 1. *Fortbildung zur Vorbereitung auf die Meisterprüfung*

Im Rahmen der Aufstiegsweiterbildung wurden 200 Anwärterinnen und Anwärter, darunter eine große Anzahl von Wieder- bzw. Neueinrichtern, durch die Landwirtschaftsschulen auf ihre Prüfung zum/r Landwirtschafts- bzw. Gärtnermeister/in vorbereitet. Erstmals wurden in Brandenburg 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und Prüfungen zum/r Molkereimeister/in und zum/r milchwirtschaftlichen Labormeister/in realisiert.

### 2. *Fortbildung zum Fachagrarwirt*

Nach Baden-Württemberg wurde in Brandenburg 1995 als zweitem Bundesland gemäß der Bundesfortbildungsverordnung vom 1. Oktober 1993 begonnen, "Fachagrarwirte für Baumpflege und Baumsanierung" durch die Lehr- und Versuchsanstalt Gartenbau e. V. Großbeeren in Kooperation mit dem Oberstufenzentrum (OSZ) Zehlendorf auf die Prüfung vorzubereiten.

### 3. *Qualifizierung für Führungskräfte und Berater*

1994 wurde der Aufbau der "Brandenburgischen Landwirtschaftsakademie" (BLAK) am Standort Neuseddin eingeleitet. Die planerischen Vorarbeiten für die bauliche Profilierung der Heimvolkshochschule am Seddiner See als geeignete Einrichtung für ein qualifiziertes Bildungsangebot für landwirtschaftliche Führungskräfte und Berater wurden begonnen. Die Nutzung dieser Heimbildungsstätte dient der Bündelung der finanziellen Kräfte des Landes und der Stabilisierung dieser Einrichtung mit Internatscharakter, die ihre Adressaten vorwiegend im ländlichen Raum findet.

In einem gemeinsamen Finanzierungskonzept stellen das MASGF und das MELF gemeinsam Fördermittel aus dem LEADER II-Programm der Europäischen Union, kombiniert mit Landesmitteln, bis 1999 bereit.

Dabei werden Ergebnisse, u. a. der Untersuchungen zum Weiterbildungsbedarf von



Führungskräften, zugrunde gelegt, die 1995 gemeinsam von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und dem MELF durchgeführt wurden.

#### **14.4.2. Allgemeine Weiterbildung**

Das Interesse der Weiterbildungseinrichtungen an einer Zusammenarbeit mit dem MELF in den Fragen der Weiterbildung im Zusammenhang mit der ländlichen Entwicklung ist weiter gewachsen. Neben einer Vielzahl von Einzelberatungen mit Bildungseinrichtungen steht die Mitwirkung bei der kontinuierlichen Qualifizierungsarbeit für Bildungsträger im ländlichen Raum durch das Pädagogische Landesinstitut Brandenburg. Fördermittel stehen hier nur in geringem Umfang im Rahmen der Richtlinie zur Entwicklung der ländlichen Räume (ELR) zur Verfügung.

Als besonderes Bildungsangebot entstand auf Initiative des MELF die "Brandenburgische Landwerkstatt" - Schule für Dorf und Flur. Sie hat in ihrer zweijährigen Arbeit einen wichtigen Beitrag zur Weiterbildung und Aktivierung aller in der Dorfentwicklung beteiligten Interessengruppen geleistet. Neben Grundseminaren, an denen Bürger und Mandatsträger aus Dörfern teilnehmen, die sich auf dem Wege der Dorfentwicklung befinden, wurden erste Aufbauseminare durchgeführt. Die Teilnahme wird durch das MELF gefördert, die inhaltliche Arbeit im Kontakt insbesondere auch mit der Brandenburg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ntwickelt.

Dieses Bildungsangebot trägt durch seine Anbindung an die Heimvolkshochschule in Neuseddin ebenfalls zur Sicherung der Stabilität dieser Bildungsstätte für den ländlichen Raum bei.

Neben den beschriebenen Seminarangeboten ist in der Heimvolkshochschule der Aufbau einer Infothek vorgesehen, ein umfassendes Informationsinstrumentarium für alle Menschen aus dem ländlichen Raum, aber auch Hilfsmittel für die Kommunen, Planer und Behörden zur Entwicklung des ländlichen Raumes. Ferner wird eine Ausstellung zum Thema "Ländliches Bauen" für die Planungsregionen Brandenburgs vorbereitet sowie eine Schriftenreihe in Zusammenarbeit mit der "Märkischen Akademie Ländlicher Raum" entwickelt.

#### **14.4.3. Entwicklung von Weiterbildungsstrukturen im ländlichen Raum**

§ 18 des Landwirtschaftsförderungsgesetzes legt fest, daß das Landwirtschaftsministerium Landwirtschaftsschulen und Einrichtungen in kommunaler Trägerschaft, Modellprojekte sowie betriebliche Qualifizierungsmaßnahmen, wenn es die Haushaltslage zuläßt, fördern kann. Damit ist die Rechtsgrundlage geschaffen, auf der das Landwirtschaftsministerium für seinen Zuständigkeitsbereich als oberste Landesbehörde eine Regelung über die Art der Förderung der

Berufsbildung in der Landwirtschaft anbietet. Der politischen Verantwortung des Landwirtschaftsministeriums für die Förderung und den Erhalt der Leistungs- und Wettbewerbsfähigkeit in der Landwirtschaft, die in hohem Maße von der Qualifikation der Mitarbeiter abhängt, wird so Rechnung getragen.

Die bisherige Durchführung der Förderung der Landwirtschaftsschulen auf der Basis des § 18 Landwirtschaftsförderungsgesetz sowie die jährlich durchgeführten Ausschreibungen von ESF-Projekten auch für die freien Träger reichen zu einer Bestandssicherung dezentraler Angebote sowie Initiierung regionalspezifischer bedarfsgerechter Bildungsmaßnahmen nicht aus. Eine dauerhafte Stützung des Bildungssystems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ausschließlich auf die freiwilligen Leistungen der Kreise, die Förderung durch das MELF und die Existenz der EU-Förderung ist nicht geeignet, die notwendige Verbesserung herbeizuführen.

Es wird in Zukunft darauf ankommen, die weiterbildungsorganisatorischen Aufgaben, die z. Zt. von den ländlichen Erwachsenenbildungszentren (Landwirtschaftsschulen bzw. VHS), den LVA's oder freien Trägern unsystematisch und nicht flächendeckend wahrgenommen werden, zu bündeln.

#### **14.5. Umweltbildung für Erwachsene im 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MUNR)**

Neben den allgemeinen, politischen und kulturellen Bildungsangeboten ist die Umweltbildung auch im Land Brandenburg zu einer wesentlichen Aufgabe geworden, um eine dauerhafte und umweltgerechte Entwicklung zu fördern. Dabei kommt der Umweltbildung eine Schlüsselrolle zu, wenn es darum geht, den Bewußtseinswandel bei den Menschen herbeizuführen, ein ökologisches und ethisches Bewußtsein zu schaffen, Werte und Einstellungen zu prägen sowie Fähigkeiten und Verhaltensweisen zu entwickeln, die mit einer nachhaltigen Entwicklung vereinbar sind. Die herauszubildenden Entscheidungs- und Handlungskompetenzen müssen es jedem ermöglichen, sich den aktuellen ökologischen Herausforderungen im privaten oder beruflichen Bereich zu stellen. Darunter ist zu verstehen, daß die in Politik, Wirtschaft und Verwaltungen über Umweltfragen entscheidenden Personen ebenso wie die Menschen in ihrer Eigenschaft als Verbraucher oder bei ihrem Freizeitverhalten weitergebildet werden müssen, um ausreichend darüber informiert zu sein, welche Folgen für die Umwelt mit ihren Entscheidungen verbunden sind bzw. welche vernünftigen Alternativen es gibt.

Umweltbildung muß zeigen, daß es nicht allein um den Erhalt der Natur im eigenen Garten, sondern um verantwortliches und wirksames Handeln im globalen Kontext geht.

Die Praxis zeigt, daß der wachsenden Umweltsensibilität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nicht automatisch umweltverträgliches Handeln folgt. Mit dem Ziel, die Gesellschaft durch

Aufklärung und Bildung in allen Bereichen zu umweltverträglichem Handeln zu bewegen, müssen daher gleichzeitig auch politische Rahmenbedingungen geschaffen werden, die dieses Handeln ermöglichen.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müssen befähigt werden, sich an den notwendigen Lern- und Gestaltungsprozessen zu beteiligen.

Das 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sieht den Schwerpunkt seiner Handlungsmöglichkeiten im außerschulischen Bereich der Umweltbildung. Diese steht nicht in Konkurrenz zum schulischen Bildungsauftrag und kann die schulische und berufliche Umweltbildung nicht ersetzen. Wohl aber ist sie eine den aktuellen Zukunftsfragen gemäße und nicht mehr wegzudenkende Ergänzung klassischer Bildungsangebote.

Das Themenspektrum und die Angebotsformen der Umweltbildung für Erwachsene sind breit gefächert. Das liegt u.a. im integrativen Charakter von Umweltbildung und in der Tatsache begründet, daß sich die umweltorientierte Bildung und Erziehung sowohl mit der Dynamik der physikalischen, biologischen und sozio-ökonomischen Umwelt als auch mit der menschlichen Entwicklung befassen muß. Die Einbindung aller Fachdisziplinen ist in diesem Zusammenhang ebenso erforderlich wie die Anwendung formaler und nichtformaler Methoden und geeigneter und wirksamer Kommunikationsmittel.

Neben der berufsbezogenen Weiterbildung, beispielsweise im Bereich der Abfallberatung, des Naturschutzes und der Landschaftspflege, besitzt die allgemeine Zugänglichkeit der Angebote zur Umweltbildung für alle interessierten Personen eine hohe Priorität.

Diese Schwerpunktsetzung resultiert insbesondere aus der Tatsache, daß die Arbeitsmarktwirksamkeit vieler Fortbildungs- und Umschulungsmaßnahmen freier Bildungsträger als eher gering zu bewerten ist. Die Prognosen zur Entstehung neuer und gleichzeitig dauerhafter Arbeitsplätze im Umweltbereich sind mittel- und langfristig nur über konkrete Bedarfsanalysen des Arbeitsmarktes und darauf abgestimmte Qualifizierungskonzepte in die Realität umzusetzen.

Vor diesem Hintergrund kommt der Umweltbildung für Erwachsene im Weiterbildungsbereich eine besondere Bedeutung zu. Die rasante Entwicklung im Technik-, Technologie-, Kommunikations- und weiteren innovativen Bereichen, die zudem von einem ständigen Anwachsen rechtlicher Regelungen begleitet werden, findet in den letzten Jahren auch bevorzugt im ökologischen Bereich ihren Niederschlag. Die Fülle der Informationen und der unterschiedlichen Handlungsanforderungen macht es erforderlich, Weiterbildungsangebote in Bildungseinrichtungen in Form von Veranstaltungen, Tagungen, Seminaren oder Workshops anzubieten. Zunehmend bewährt haben sich aus pädagogischer Sicht aber auch Projekte, die sich durch eine klare Zieldefinition, zeitliche Begrenzung und einen handlungs- und ergebnisorientierten Ansatz auszeichnen.

Die Landeslehrstätte fü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Oderberge Lebus" bietet als Bildungseinrichtung des Landesumweltamtes theoretische und praktische Fort- und Weiterbildung für haupt- und ehrenamtliche Naturschutzmitarbeiter und interessierte Erwachsene an, die sich in Ein- oder Mehrtageskursen mit verschiedenen Themen aus dem Umwelt- oder Naturschutzbereich befassen. Schwerpunkte dabei bilden u. a. die sehr komplexen Themen wie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Planungsrecht, Landnutzung, Wasserwirtschaft, Abfall und Altlasten oder Umwelttoxikologie.

In zwei landesweiten beruflichen Weiterbildungsprojekten wurden flächendeckend für das Land Brandenburg Abfallberater und Personal für die Naturwacht in Großschutzgebieten qualifiziert. Die Abfallberater bieten bei den entsorgungspflichtigen Körperschaften, aber auch in privaten Haushalten und in Gewerbebetrieben Aufklärung und Beratung zur Abfallvermeidung und zur Kreislaufwirtschaft an.

Die Naturwacht erfüllt in den Biosphärenreservaten, Naturparks oder im Nationalpark die Aufgaben zur Besucherinformation und -betreuung, zur Kontrolle und fachlichen Begleitung des Vertragsnaturschutzes sowie zur Öffentlichkeitsarbeit und Umweltbildung.

Bei beiden Projekten wurden die Möglichkeiten der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genutzt, um durch die bedarfsorientierte und gesetzlich legitimierte Weiterqualifizierung von arbeitslos gewordenen Personen einen neuen Einstieg in die Berufs- und Arbeitswelt zu ermöglichen.

Die Richtlinie zur Förderung der Umweltbildung, -erziehung und -information des MUNR ermöglichte in den vergangenen 5 Jahren die Durchführung von über 100 Projekten und zahlreichen fachlichen Veranstaltungen zur Vermittlung von umweltbezogenem Wissen, naturkundlicher, umweltpolitischer und alltagsökologischer Bildung, bis hin auf konkretes, umweltgerechtes Handeln ausgerichtete Vorhaben.

Für Erwachsene wurden spezielle Angebote entwickelt oder integrative Formen des gemeinsamen Lernens mit anderen Altersgruppen gewählt. Als Beispiele seien hier die Veranstaltungen zum Thema "Ökologische Stadtentwicklung - Bauwerks-Naturierungen" im Umweltzentrum Cottbus genannt, die als Foren, Workshops und Symposien sich an Mieter und Vertreter von Wohnungsgesellschaften, Gewerbetreibende, Senioren oder interessierte Besucher der BUGA richteten. Von Vereinen aus dem Umwelt- und Naturschutzbereich wurden Themen wie "Umweltfreundlicher Tourismus", "Kommunale UVP" oder "Umweltfreundlicher Verkehr" als regionale oder überregionale Weiterbildungsveranstaltungen durchgeführt, die auf gute Resonanz in der Bevölkerung und bei den kommunal Bediensteten getroffen sind.

Umweltbildungsangebote für Erwachsene werden in den nichtberuflichen Bereichen der Weiterbildung bevorzugt in den Natur- und Umweltzentren, aber auch in waldpädagogischen und anderen geeigneten Einrichtungen des Landes Brandenburg unterbreitet. Die Natur- und Umweltzentren befinden sich in der Regel in freier Trägerschaft und sind nach einer Aufbau-

oder Umstrukturierungsphase gegenwärtig dabei, sich inhaltlich zu profilieren. Die Umweltbildungsangebote orientieren sich schon jetzt am Bedarf sowie an regionalspezifischen Schwerpunkten und werden für verschiedene Zielgruppen, unter Berücksichtigung konkreter Randbedingungen, attraktiv und flexibel angeboten. Neben der Umweltbildung und -erziehung werden Umweltinformation und -beratung für Verbraucher ebenso angeboten wie Sensibilisierungsveranstaltungen. Entsprechende Veranstaltungskonzepte und -programme bilden den Hintergrund für die verschiedenen Angebotsformen.

Die Entwicklung qualitativ hochwertiger Veranstaltungen zu Umweltthemen erfolgt auch mit dem Ziel der Anerkennung als Weiterbildungsveranstaltung zur Bildungsfreistellung im Rahmen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Die Natur- und Umweltzentren leisten zukünftig einen erweiterten Beitrag zur Grundversorgung der Bevölkerung im Weiterbildungsbereich.

Umweltbildung wird heute allgemein als integraler Bestandteil der Umweltpolitik verstanden. Unstrittig ist auch der Beitrag, den Umweltbildung zur Umsetzung des "Leitbildes der dauerhaft umweltgerechten Entwicklung" leisten muß. Aus diesem Grund haben die Umweltminister aller Bundesländer im Juni dieses Jahres einen Vorschlagskatalog beschlossen, wie Umweltbildung zukünftig verstärkt zu fördern ist. Als ein Schwerpunkt wird die Qualifizierung von Multiplikatoren der Umweltbildung gesehen, um der gestiegenen Nachfrage nach professionellen und bedarfsgerechten Angeboten zu entsprechen. Sie sehen darin einen Weg, die Agenda 21 (Kapitel 36) zu verwirklichen, die sowohl der formalen als auch der nichtformalen Bildung eine Schlüsselrolle bei der Umsetzung des o. g. Leitbildes zuschreibt.

Eine wichtige Frage ist in diesem Zusammenhang, welche Themen die Umweltbildung heute primär umfassen muß und welche strukturellen Rahmenbedingungen erfüllt sein müssen, um diesem hohen Anspruch Rechnung zu tragen. Auf dem Weg zu einem Landeskonzept "Umweltbildung" sind die verantwortliche Mitarbeit, Kommunikation und Kooperation der Fachressorts, der Träger von Umweltbildungsmaßnahmen und eine aktive Beteiligung von umwelt-, entwicklungs-, bildungs-, geschlechterspezifischen und sonstigen Interessengruppen erforderlich.

## **15. Anhang**

### **15.1. Überblick über anerkannte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anerkannte Landesorganisationen und anerkannte Heimbildungsstätten/Heimvolkshochschulen**



문서 번호 49

통일후 5년 시점의 구동독지역 청소년

1997년

담당자 / 기관: 케어스틴 자이링; 연방정치교육원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간하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으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통일된 독일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초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얼마만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근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청소년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직업교육과 실제 직장생활 간의 연결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통해 정리되었다:

- 1990 년도와 1993 년도 사이에 직업희망 및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기회에 대한 주관적 추측에 있어 동·서 지역 간의 대비
- 구동독의 경우 1990 년도에서 1994 년도까지, 서독지역의 경우 1989 년도에서 1993 년도까지 각각 동서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추이
- 1989/90 년도에서 1993/94 년도까지 청소년들 중 실업자 수와 실업기간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0, S. 52-55.





## Ostdeutsche Jugendliche fünf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 I. Einleitung

Zu untersuchen, wie Jugendliche auf die Veränderung ihres Alltags durch politische und ökonomische Entwicklungen reagieren, ist in der anhaltenden Umbruchsituation, in der sich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it der Vereinigung am 3. Oktober 1990 befindet, wichtig. Welches Verhältnis die ostdeutschen Jugendlichen zu der für sie neuen Gesellschaft entwickeln, wird nicht zuletzt von der ökonomischen Entwickl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bhängen. Diese bestimmt in hohem Maße die Chancen ihrer persönlichen und beruflichen Entwicklung.

Die zentrale Fragestellung dieses Beitrages<sup>1</sup> – wie die Integration ostdeutscher Jugendlicher innerhalb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verläuft – zielt

1. auf die *subjektive* Sicht der Jugendlichen: Wie ist ihre Zukunftszuversicht, welche Erwartungen, Ängste und Sorgen haben sie?
2. und auf die *objektive* Situation der Jugendlichen: Gelingt der Übergang von der Ausbildung in das Erwerbsleben?

Fragestellungen dieser Art sind deshalb wichtig, weil so festgestellt werden kann, ob Jugendliche die Wende subjektiv als „kritisches Lebensereignis“ oder als Chance zur Realisierung einer individuell besser gestaltbaren Zukunft erleben<sup>2</sup>. Dies wird maßgeblich davon mitbestimmt, wie schnell sie sich einen Platz in der neuen Gesellschaft erobern können. Sollte dieser Prozeß durch Arbeitslosigkeit, sozialen Abstieg oder andere soziale Ausgrenzungsprozesse behindert werden oder so-

gar scheitern, würde dies weitreichende Konsequenzen haben: einerseits für die Jugendlichen, die sich dann mit einer Gesellschaft konfrontiert sähen, in der sie zwar leben müssen, die sie aber nicht verstehen und vielleicht sogar in wichtigen Bereichen ablehnen, andererseits für die Gesellschaft, die die Spannungen auffangen müßte, die zwischen dieser wichtigen Teilgruppe und den bestehenden Normen und Wertmustern entstehen<sup>3</sup>.

Während ostdeutsche Jugendliche in einer Umbruchgesellschaft leben, haben sich für westdeutsche Jugendliche die Lebensbedingungen seit de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kaum verändert, deshalb wird u. a. der Transformationsprozeß von ihnen mit weniger innerer Anteilnahme verfolgt. Selbst wenn bei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die Gemeinsamkeiten in ihren Lebenszielen und Wertorientierungen überwiegen sollten, ist eher davon auszugehen, daß sich aufgrund der sehr unterschiedlichen Sozialisationsbedingung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auf längere Sicht „kein gemeinsamer Generationszusammenhang“ entwickelt<sup>4</sup>.

Die Antworten auf die oben gestellten Fragen können zum gegenwärtigen Zeitpunkt – fünf Jahre nach der Wende – und mit dem vorliegenden empirischen Material nur vorläufigen Charakter haben. Denn welchen zusätzlichen Einfluß sozialisations-

3 Zugespielt könnte man formulieren: Hat die Jugend keine Zukunft, hat auch die Gesellschaft keine Zukunft. Sie gerät dann in Gefahr, wenn die Jugend in ihr keine annehmbare Perspektive mehr sieht. Die Jugend stellt also insofern für den Prozeß des Zusammenwachsens beider Teile Deutschlands den entscheidenden Hoffnungsträger dar (vgl. Stefan Böckler, Die deutsche Jugend. Voraussetzungen und Perspektiven der Generations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21 [1992] 5, S. 314), als ihre soziale „Integration ... in die politische, ökonomische und kulturelle Ordnung einer Gesellschaft ... eine grundlegende Notwendigkeit für die Aufrechterhaltung bestehender gesellschaftlicher Strukturen ist.“ Zit. nach: Martin Bommer/Carsten Klingemann/Gabriele Köhler/Albert Scherr, Bereiche anwendungsorientierter soziologischer Forschung, in: Harald Kerber/Arnold Schmieder (Hrsg.), Soziologie, Reinbek bei Hamburg 1991, S. 66.

4 Eine entsprechende These vertritt bspw. Dieter Kirchhöfer, Eine Umbruchgeneration? Wende- und Vereinigungserfahrungen, in: Jugendwerk der Deutschen Shell (Hrsg.), Jugend '92, Bd. 2, Opladen 1992, S. 15–33.

1 Das vorliegende Manuskript basiert auf einer in wesentlichen Teilen überarbeiteten und aktualisierten Fassung eines früheren WZB-Arbeitspapiers. Vgl. Kerstin Seiring, Jugendliche im Transformationsprozeß. Vorbedingungen, Probleme und Chancen zur Integration ostdeutscher Jugendlicher im vereinten Deutschland, Arbeitsgruppe Sozialberichterstattung,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P 94–103, Berlin, 1994.

2 Vgl. hierzu ausführlich: Imken Behnken/Jürgen Zinnecker, Schülerstudie 1990. Jugendliche im Prozeß der Vereinigung, Weinheim–München 1991.

bedingte Unterschiede auf „die gegenwärtige Formierung jugendlicher Lebensorientierungen“ in Deutschland haben werden, ist auch davon abhängig, „inwieweit es gelingt, dieser generationsprägenden Lebenserfahrung“ eine relativ einheitliche Form zu geben<sup>5</sup>. D. h. in erster Linie wird die Ermöglichung von vergleichbaren Lebensbedingungen und -erfahrungen für Jugendliche in Ost und West mitbestimmend dafür sein, wie erfolgreich der Prozeß des Zusammenwachsens beider Jugendgenerationen verläuft.

## II. Anmerkungen zum Jugendbegriff und zur Vorgehensweise

### 1. Zum Jugendbegriff

Viele Jugendforscher haben sich ihrem Untersuchungsgegenstand genähert, indem sie den Übergangscharakter von Jugend, d. h. den Aspekt der Übergangsphase vom Kind zum Erwachsenen, hervorgehoben und gleichzeitig auf die wichtige Funktion dieser Lebensphase bei der Entwicklung von Werten und Überzeugungen für das eigene Denken und Verhalten von Jugendlichen hingewiesen haben. In der Jugendphase finden Prozesse der Aneignung bestimmter Normen und Regeln bei gleichzeitigem Erwerb der ökonomischen, sozialen und juristischen Voraussetzungen für den Eintritt in das Erwachsenenleben statt. Dieses Kriterium ist auch Bestandteil einer Definition von Jugend durch Helmut Schelsky<sup>6</sup>. Der Prozeßcharakter von Jugend, wie ihn Schelsky verwendet, enthält wesentliche Merkmale, um den Jugendbegriff einzugrenzen. Schelsky ging in seiner Definition von Jugend von einer Integration nachwachsender Generationen in ein relativ stabiles Gefüge aus, was allerdings derzeit nur für westdeutsche Jugendliche zutrifft. Für ostdeutsche Jugendliche ist eine Integration in ein stabiles Gesellschaftssystem gerade nicht gegeben, da sich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Struktur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genwärtig in einer Umbruchphase befinden, weshalb Schelskys Begriff von Jugend einer Ergän-

zung bedarf. Obwohl viele Jugendliche in der DDR ihren Platz noch nicht gefunden hatten bzw. finden konnten, müssen sie diesen nun in einer Gesellschaft finden, die selbst einem umfassenden Wandel unterliegt. Diese *doppelte Dynamik* – der Übergangsprozeß der Jugendlichen vom Kind zum Erwachsenen und die Transformation der Gesellschaft – ist ein spezifisches Problem bei der Integration ostdeutscher Jugendlicher in die neue Gesellschaft<sup>7</sup>.

### 2. Zur Vorgehensweise

Mit den Daten des Sozio-ökonomischen Panels (SOEP) werden die Jugendlichen (16 Jahre und älter) als eigene Subgruppe innerhalb der Gesamtbevölkerung mit spezifischen Lebensbedingungen, Einstellungs- und Wertmustern lokalisiert<sup>8</sup>. Außerdem bietet das Material die Möglichkeit, Vergleiche zwischen ost- bzw. westdeutschen Jugendlichen und älteren Generationen zur gleichen Thematik durchzuführen. Soweit für eine Untersuchung von Einstellungs- und Wertmustern im SOEP-Ost und -West vergleichbare Indikatoren vorhanden sind, wird ein *Kreuzvergleich* vorgenommen:

7 „In Theoriekonzeptionen, die stärker auf den sozialen Wandel in Gesellschaften abheben, wird Jugend sicherlich viel stärker als Problemgruppe thematisiert, weil in sich dynamisch verändernden Gesellschaften einerseits tradierte Wertvorstellungen und Verhaltensvorschriften von Jugendlichen nicht einfach übernommen werden können, sondern neue Wertvorstellungen und Verhaltensvorschriften entwickelt werden müssen und andererseits auch eine Integration in eine vorgegebene Ordnung nicht stattfinden kann, weil diese Ordnung selbst einem Wandel unterliegt.“ (Zit. nach Hans Bertram, *Jugend heute. Die Einstellung der Jugend zu Familie, Beruf und Gesellschaft*, München 1987, S. 2.)

8 Das Sozio-ökonomische Panel (SOEP) ist eine Längsschnittuntersuchung privater Haushalte in Deutschland und wird seit 1984 im jährlichen Rhythmus bei denselben Personen, Haushalten und 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durchgeführt (SOEP-West). 1984 hatte die erste Datenerhebung einen Umfang von rund 6000 Haushalten und mehr als 12200 Personen. Diese Befragung ist repräsentativ für die Wohnbevölkerung der Bundesrepublik über 16 Jahre. Das Sozio-ökonomische Panel wurde erstmals im Juni 1990, also noch vor der Wiederverein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hoben (SOEP-Ost). Seit diesem Zeitpunkt erfolgt die Befragung analog zum SOEP-West in jährlichem Rhythmus in Ostdeutschland und ermöglicht so einen Direktvergleich zwischen objektiven Lebensbedingungen und subjektiver Bewertung Ost- und Westdeutscher. In Ostdeutschland wurden insgesamt ca. 2030 Haushalte und ca. 4200 Personen befragt. (Vgl. Projektgruppe Panel, in: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1993] 1/2, S. 27–43) In die Auswertung wurden für ostdeutsche Jugendliche die Wellen 1990 bis 1994 und für westdeutsche Jugendliche die Wellen 1989 bis 1993 einbezogen. Die (hochgerechnete) Fallzahl beträgt für die Oststichprobe des SOEP N = 620000 und liegt für die Weststichprobe bei N = 3222000 (ohne ausländische Jugendliche).

5 Vgl. hierzu St. Böckler (Anm. 3), S. 323.

6 „Jugend‘ im soziologischen Sinne ist die Verhaltensphase des Menschen, in der er nicht mehr die Rolle des Kindes spielt . . . und in der er noch nicht die Rolle des Erwachsenen als vollgültiger Träger der sozialen Institutionen, also z. B. der Familie, der öffentlichen und politischen Ordnung, der Rechts- und Wirtschaftsordnung usw. übernommen hat.“ (Zit. nach Helmut Schelsky, *Die skeptische Generation. Eine Soziologie der deutschen Jugend*, Frankfurt–Berlin–Wien 1975, S. 15f.)

**Tabelle 4: Gegenüberstellung von Erwerbsabsichten und subjektiver Einschätzung der Arbeitsmarktchancen Ost- und Westdeutscher zwischen 1990 und 1993**

		1990		1991		1992		1993	
		M	W	M	W	M	W	M	W
in Prozent									
<b>Schüler/Studenten:</b>									
Absicht, auf jeden Fall eine Erwerbstätigkeit aufzunehmen <sup>1</sup>	Ost	96	90	79	87	87	82	81	85
	West	80	81	85	79	78	78	71	85
Stelle finden ist schwierig/praktisch unmöglich <sup>2</sup>	Ost	66	74	91	82	83	85	65	86
	West	65	74	56	75	50	65	68	83

1 „Beabsichtigen Sie, in der Zukunft (wieder) eine Erwerbstätigkeit aufzunehmen?“

2 „Wenn Sie jetzt eine Arbeit suchen würden: Ist oder wäre es für Sie leicht, schwierig oder praktisch unmöglich, eine geeignete Stelle zu finden?“

Abkürzungen: „M“ = männliche Jugendliche; „W“ = weibliche Jugendliche.

Datenbasis: SOEP (1990 bis 1993); eigene Querschnittsberechnungen.

des wollen – Familie und Beruf –, heute zu kämpfen haben, werden sich wohl aufgrund der schlechten Arbeitsmarktsituation und des Wegfalls vieler von den Frauen der DDR geschätzten sozialpolitischen Maßnahmen längerfristig nicht lösen lassen.

#### IV. Auf dem Weg in die neue Gesellschaft: Übergänge von der Ausbildung in das Berufsleben

Nachdem dargestellt wurde, wie Jugendliche ihre Lebenssituation „subjektiv“, d. h. aus ihrer persönlichen Sicht, beurteilen, soll nun der Frage nachgegangen werden, wie die Integration ostdeutscher Jugendlicher in den Arbeitsmarkt „objektiv“ verläuft. Zwar kann zum gegenwärtigen Zeitpunkt und auf Basis der bislang vorliegenden empirischen Ergebnisse keine endgültige Antwort auf diese Frage gegeben werden, aber es soll versucht werden, erste Anhaltspunkte dafür zu finden, wie ostdeutsche Jugendliche die Bewältigung des Übergangs von Nichterwerbstätigkeit und Ausbildung in die Erwerbstätigkeit gelingt.

Vor der Darstellung des *objektiven* Verlaufs der Erwerbsbiographien ostdeutscher Jugendlicher soll zunächst eine kurze Gegenüberstellung von Erwerbsabsichten und *subjektiver* Einschätzung der Chancen am Arbeitsmarkt erfolgen.

##### 1. Erwerbsabsichten und Arbeitsmarktchancen

Wie aus Tabelle 4 zu entnehmen ist, äußerten 1990 insgesamt 93 Prozent der ostdeutschen Jugend-

lichen (96 Prozent männliche und 90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die feste Absicht, in Zukunft eine Erwerbstätigkeit aufnehmen zu wollen. Der Anteil derer, die auch in den drei Folgejahren noch dieser Antwortposition zustimmten, hat sich bis 1993 auf 83 Prozent (männliche Jugendliche um 81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um 85 Prozent) reduziert. Dieser Trend ist weniger als rückläufige Erwerbsneigung ostdeutscher Jugendlicher, sondern vielmehr als Ausdruck einer realistischen Einschätzung zu interpretieren, inwieweit eine Erwerbstätigkeit unter den heutigen Bedingungen eines immer knapper werdenden Arbeitsplatzangebotes noch realisiert werden kann. Bei westdeutschen Jugendlichen hatten schon 1990 weniger Jugendliche, insgesamt 80 Prozent, die Absicht geäußert, „auf jeden Fall“ erwerbstätig zu werden. Dieser Anteil betrug im Jahr 1993 noch 78 Prozent, war also relativ stabil.

Kaum Unterschiede zwischen nichterwerbstätigen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gab es im Frühjahr 1990 bei der Einschätzung, eine geeignete Arbeitsstelle zu finden wäre „schwierig“ oder „praktisch unmöglich“: 66 Prozent bzw. 65 Prozent der männlichen Jugendlichen aus Ost und West sowie jeweils 74 Prozent der weiblichen Jugendlichen befürchteten hierbei Probleme. Während in den beiden Folgejahren der Anteil ostdeutscher Jugendlicher, die ihre Arbeitsmarktchancen schlecht einschätzen, steigt, sinkt er bei westdeutschen Jugendlichen. 1993 hingegen wurden die Arbeitsmarktchancen von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ähnlich schlecht eingeschätzt: 65 Prozent bzw. 68 Prozent der ost- und westdeutschen männlichen Jugendlichen und 86 Prozent bzw. 83 Prozent der weiblichen Jugendlichen halten es für

**Tabelle 5: Erwerbsverläufe von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zwischen 1990 und 1994 (Ost) bzw. 1989 und 1993 (West)**

	Erwerbsstatus nach											
	1 Jahr			2 Jahren			3 Jahren			4 Jahren		
	G	M	W	G	M	W	G	M	W	G	M	W
in Prozent												
<b>Erwerbsstatus von Ost-Jugendlichen *)</b>												
- Erwerbstätig	26	30	23	34	33	35	37	33	42	50	46	55
- Berufsausbildung	38	38	39	34	29	38	23	24	22	12	10	14
- Schule/Studium	24	21	27	23	24	21	28	31	25	26	30	21
- Arbeitslos	12	11	12	10	14	6	11	12	10	13	14	11
Mindestens eine Arbeitslosenphase zwischen:												
- 1990 und 1991	12	11	12									
- 1990 und 1992				18	19	16						
- 1990 und 1993							24	28	21			
- 1990 und 1994										30	33	26
<b>Erwerbsstatus von West-Jugendlichen *)</b>												
- Erwerbstätig	20	16	25	39	36	42	46	42	50	52	51	53
- Berufsausbildung	40	41	39	30	29	30	23	25	21	14	17	12
- Schule/Studium	37	41	32	30	33	26	28	31	25	29	29	29
- Arbeitslos	3	2	4	2	2	1	3	2	4	5	3	7
Mindestens eine Arbeitslosenphase zwischen:												
- 1989 und 1990	3	2	4									
- 1989 und 1991				4	3	5						
- 1989 und 1992							6	5	7			
- 1989 und 1993										9	8	10

\*) Basisjahr der Längsschnittdaten für Ost-Jugendliche ist hier 1990; Basisjahr für West-Jugendliche ist aus datentechnischen Gründen 1989. Status der Jugendlichen zum Basisjahr war jeweils „Nichterwerbstätig“ bzw. „In Ausbildung“.

Abkürzungen: „G“ = Insgesamt; „M“ = männliche Jugendliche; „W“ = weibliche Jugendliche.  
Aufgrund von Rundungsfehlern addieren sich die Prozentzahlen nicht in jedem Fall auf 100.

Datenbasis: SOEP (1989–1994), eigene Längsschnittberechnungen (für 1994 vorläufige Hochrechnung).

„schwierig“ oder „praktisch unmöglich“, eine geeignete Stelle zu finden. Damit fällt die Beurteilung der Arbeitsmarktchancen bei ostdeutschen Jugendlichen zwar wieder etwas „optimistischer“ aus als 1991 und 1992; allerdings liegt der Anteil der weiblichen Jugendlichen, die diese Befürchtungen äußerten, ähnlich wie in Westdeutschland weit über dem der männlichen Jugendlichen. Dies entspricht der tatsächlichen Arbeitsmarktlage.

## 2. Erwerbsverläufe ost- und westdeutscher Jugendlicher

Nachdem gezeigt wurde, wie Jugendliche ihre Arbeitsmarktchancen beurteilen, soll nun anhand der Daten des SOEP der Jahre 1990 bis 1994 überprüft werden, wie der Übergang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in die Erwerbstätigkeit tatsächlich

verlaufen ist (vgl. Tabelle 5). Betrachtet man rückblickend ab 1994 den bis dahin erreichten Zielstand des Erwerbsverlaufs ost- und westdeutscher Jugendlicher, der gleichzeitig wichtige Aspekte ihrer Integration in die Gesellschaft widerspiegelt, ergibt sich für die beiden Gruppen folgendes Bild:

### a) Ostdeutsche Jugendliche

Die Prozentanteile von 1991 bis 1994 lassen insgesamt nur wenig Hinweise finden, die für deutlich zunehmende Probleme beim Berufseintritt Jugendlicher sprechen. Von den 1990 noch nicht erwerbstätigen ostdeutschen Jugendlichen war 1991, nach einem Jahr, bereits mehr als jeder vierte erwerbstätig. Dieser Anteil erhöhte sich kontinuierlich bis 1994 auf über 50 Prozent, gleichzeitig ging erwartungsgemäß der Anteil der in Ausbil-

dung befindlichen Jugendlichen deutlich zurück. Die Zahl der arbeitslos gemeldeten Jugendlichen hat sich bis 1994 insgesamt nur wenig verändert. Eine nennenswerte Gruppe von dauerarbeitslosen Jugendlichen ist über den untersuchten Zeitraum nicht zu erkennen. Die Prozentangaben in Tabelle 5 beziehen sich auf die Verteilung des Erwerbsstatus in den einzelnen Jahren. Die Veränderungen dieser Verteilungen spiegeln jedoch das Ausmaß tatsächlicher Erwerbsübergänge nicht korrekt wider, da in ihnen lediglich der „Endsaldo“ von Ein- und Austritten in einzelne Statuskategorien zum Ausdruck kommt. Betrachtet man die Gesamtheit aller stattgefundenen Statuspassagen im einzelnen, ergibt sich ein detaillierteres Bild über die Struktur individueller Erwerbsverläufe im Untersuchungszeitraum<sup>18</sup>.

1994 waren insgesamt 50 Prozent der in die Untersuchung einbezogenen ostdeutschen Jugendlichen erwerbstätig, d.h., der Übergang von der Ausbildung in das Erwerbsleben gelang den meisten Jugendlichen, verlief jedoch nicht für alle reibungslos. Von diesen haben allerdings nur 39 Prozent (42 Prozent männliche und 36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nach ihrer Ausbildung einen „regulären“ Wechsel – ohne eine weitere, erneute Ausbildung bzw. ein Studium oder eine Arbeitslosenphase – in das Erwerbsleben vollzogen. 10 Prozent der ab 1991 erwerbstätig gewordenen Jugendlichen blieben bis 1994 auch konstant erwerbstätig. Umgekehrt hatten von den 1994 Erwerbstätigen in den zurückliegenden Jahren 11 Prozent mindestens eine Phase der Arbeitslosigkeit erlebt (12 Prozent männliche und 10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In Ausbildung waren 1994 noch insgesamt 12 Prozent der Jugendlichen, davon drei Prozent konstant seit 1990, weitere sechs Prozent unterbrachen bzw. beendeten ihr Studium, um dann noch einmal eine Berufsausbildung oder ein anderes Studium zu beginnen. Eine Erklärung dafür könnte sein, daß sich einige dieser Jugendlichen aufgrund der schwierigen Arbeitsmarktlage in einer „Warteschleife“ befanden bzw. daß sie nach der Wende die Chance nutzen wollten, nun doch noch ihren Wunschberuf zu realisieren.

Von den befragten Jugendlichen waren 1994 26 Prozent Schüler bzw. Studenten, einschließlich acht Prozent „Dauerstudenten“, die ohne Unterbrechung von 1991 bis 1994 studierten. Fast jeder zehnte heute studierende Jugendliche beendete

oder unterbrach seine Berufsausbildung, um danach ein Studium aufzunehmen. Von diesen zehn Prozent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erlebten drei Prozent nach der Beendigung ihrer Ausbildung eine Arbeitslosenphase und nahmen ein Studium auf, um ihre Arbeitslosigkeit zu beenden bzw. ihre Arbeitsmarktchancen zu verbessern. Weitere fünf Prozent der 1994 insgesamt 26 Prozent Studenten waren 1991 erwerbstätig, begannen aber in den Folgejahren entweder eine neue Berufsausbildung oder ein Studium.

Arbeitslos gemeldet waren 1994 insgesamt 13 Prozent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d.h., fast jeder siebente männliche und jede neunte weibliche Jugendliche in Ostdeutschland war 1994 ohne Arbeitsplatz. Von diesen 1994 arbeitslos gemeldeten Jugendlichen hatten drei Prozent drei Arbeitslosenphasen (mit oder ohne Unterbrechung) erlebt, fünf Prozent waren bereits zweimal und weitere fünf Prozent mindestens einmal in ihrem Erwerbsverlauf arbeitslos.

#### b) Westdeutsche Jugendliche

Bei den westdeutschen Jugendlichen nahmen in einem Zeitraum von vier Jahren insgesamt 52 Prozent der in die Untersuchung einbezogenen Jugendlichen eine Erwerbstätigkeit auf. Von diesen 1993 erwerbstätigen Jugendlichen wechselten 49 Prozent (48 Prozent männliche und 50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nach ihrer Ausbildung regulär in das Erwerbsleben. Nur 13 Prozent der 1990 erwerbstätig gewordenen Jugendlichen blieben bis 1993 auch konstant erwerbstätig. Dieses Teilergebnis entspricht in etwa dem für ostdeutsche Jugendliche festgestellten Erwerbsverlauf.

In Ausbildung waren 1993 noch insgesamt 14 Prozent der Jugendlichen, davon ein Prozent konstant seit 1990, weitere acht Prozent unterbrachen bzw. beendeten ihr Studium, um eine neue Berufsausbildung zu beginnen.

29 Prozent der bis 1993 befragten Jugendlichen waren Schüler bzw. Studenten, davon waren 13 Prozent „Dauerstudenten“. Etwa jeder fünfzehnte heute studierende Jugendliche beendete oder unterbrach seine Berufsausbildung, um danach ein Studium aufzunehmen. Von diesen sechs Prozent der westdeutschen Jugendlichen erlebte ein Prozent nach der Beendigung ihrer Ausbildung eine Arbeitslosenphase und nahm dann ein Studium auf, um die Arbeitslosigkeit zu beenden bzw. die eigenen Arbeitsmarktchancen zu verbessern. Weitere sieben Prozent der insgesamt 29 Prozent Studenten 1993 waren 1990 erwerbstätig, begannen aber in den Folgejahren

<sup>18</sup> Eine tabellarische Darstellung der Struktur individueller Erwerbsverläufe unterbleibt hier aus Platzgründen.

entweder eine neue Berufsausbildung oder ein Studium.

Arbeitslos gemeldet waren 1993 insgesamt nur fünf Prozent der westdeutschen Jugendlichen, d.h., es waren 1993 drei Prozent der männlichen und sieben Prozent der weiblichen Jugendlichen ohne Arbeitsplatz. Von diesen hatten zwei Prozent bereits zwei Arbeitslosenphasen (auch mit Unterbrechung) erlebt, drei Prozent waren mindestens einmal in ihrem Erwerbsverlauf arbeitslos.

Betrachtet man die hier für ost- und westdeutsche Jugendliche vorgestellten Erwerbsverläufe insgesamt, kommt man zu folgenden *gemeinsamen Ergebnissen*:

1. Gut der Hälfte der 1990 (Ost) und 1989 (West) nichterwerbstätigen oder in Ausbildung befindlichen Jugendlichen gelang es, innerhalb des hier betrachteten Vierjahres-Zeitraumes bis 1994 bzw. 1993 erwerbstätig zu werden.
2. Im gleichen Maß wie die Erwerbstätigkeit der Jugendlichen zunahm, nahm erwartungsgemäß vor allem die Zahl derer, die sich noch in der Ausbildung befinden, kontinuierlich ab. Waren es 1990 in Ostdeutschland 38 Prozent und 1989 in Westdeutschland noch 40 Prozent, reduzierte sich dieser Anteil bis 1994 bzw. 1993 auf 12 bzw. 14 Prozent.
3. Ähnlich verhielt es sich mit dem Anteil der Studenten unter den Jugendlichen, der bis 1994 im Osten 26 Prozent und bis 1993 im Westen 29 Prozent betrug. Während aber der Anteil der Studenten im Osten von 1991 nahezu gleichgeblieben ist, kann für Westdeutschland zwischen 1989 (37 Prozent) und 1993 (29 Prozent) ein leichter Rückgang um acht Prozent festgestellt werden. Möglicherweise beendeten die Studenten in Westdeutschland ihre Ausbildung, um eine Erwerbstätigkeit aufzunehmen, während ostdeutsche Jugendliche nach einer bereits absolvierten Ausbildung noch ein Studium begannen, um sich weiterzuqualifizieren und damit ihre Arbeitsmarktchancen zu verbessern oder auch um sich einen Berufswunsch zu erfüllen, der vor der Wende nicht realisierbar war.

*Unterschiede* in den Erwerbsverläufen bei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finden sich hingegen bei der Arbeitslosigkeit.

In der ostdeutschen Untersuchungsgruppe waren jeweils im Jahresdurchschnitt von 1991 bis 1994 zwischen 12 Prozent und 13 Prozent der Jugendlichen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bei den

westdeutschen Jugendlichen waren es 1990 nur drei und 1994 fünf Prozent. D.h. im Jahresdurchschnitt war jeweils etwa jeder fünfundzwanzigste Jugendliche im Westen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im Osten dagegen jeder achte. Noch deutlicher werden diese Unterschiede, wenn man die Jugendlichen betrachtet, die in dem hier untersuchten Vierjahreszeitraum mindestens einmal arbeitslos waren. In Ostdeutschland war dies zwischen 1990 und 1994 bei rund 30 Prozent aller befragten Jugendlichen zwischen 16 und 27 Jahren (davon 33 Prozent männliche und 26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der Fall. In Westdeutschland hingegen waren es „nur“ neun Prozent der Jugendlichen (acht Prozent männliche und zehn Prozent weibliche Jugendliche), die zwischen 1989 und 1993 mindestens einmal arbeitslos gemeldet waren.

Noch differenzierter wird dieser große Unterschied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anhand der Anzahl der Arbeitslosenphasen (vgl. Tabelle 6). In dem hier beschriebenen Untersuchungszeitraum waren insgesamt 70 Prozent der ostdeutschen und rund 90 Prozent der westdeutschen Jugendlichen in ihrem Erwerbsverlauf nie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Geschlechtsspezifische Unterschiede sind dabei eher gering. Drei Phasen der Arbeitslosigkeit erlebt zu haben, gaben fünf Prozent der ostdeutschen männlichen Jugendlichen an. In Westdeutschland hatten dies weder männliche noch weibliche Jugendliche der Untersuchungsgruppe erlebt. Jugendliche, die zwischen 1991 und 1994 bereits ein- oder zweimal arbeitslos gemeldet waren, gab es in Ostdeutschland fast dreimal so häufig wie in Westdeutschland. Diese müssen im Rahmen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als eine Problemgruppe unter den Jugendlichen lokalisiert werden. Der wichtige Übergang von der Ausbildung in die Erwerbstätigkeit ist ihnen bislang nur unter Schwierigkeiten bzw. noch nicht (wieder) gelungen.

Als wichtigstes Ergebnis der hier auszugsweise referierten Verlaufsanalyse kann damit festgehalten werden, daß bis 1994 bei der überwiegenden Mehrheit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keine schwerwiegenden Probleme beim Übergang von der Ausbildung in die Erwerbstätigkeit zu erkennen sind. Dies ist angesichts der anhaltenden Arbeitsmarktkrise in Ostdeutschland von Bedeutung und ein Indiz für die erfolgreiche Integration ostdeutscher Jugendlicher in die neue Gesellschaft. Es darf aber dabei nicht vergessen werden, daß immerhin fast jeder dritte ostdeutsche Jugendliche zwischen 1991 und 1994 bereits die Erfahrung der Arbeitslosigkeit gemacht hat.

**Tabelle 6: Anzahl/Dauer von Arbeitslosenphasen bei ost- und westdeutschen Jugendlichen 1989/90 bis 1993/94**

	Ostdeutsche Jugendliche			Westdeutsche Jugendliche		
	G	M	W	G	M	W
	in Prozent					
Anzahl der Arbeitslosenphasen:						
- eine Arbeitslosenphase	17	19	14	6	6	6
- bis zu zwei Jahren arbeitslos	10	9	12	3	2	4
- bis zu drei Jahren arbeitslos	3	5	0	0	0	0
- bis zu vier Jahren arbeitslos	0	0	0	0	0	1
- Keine Arbeitslosenphase	70	67	74	90	92	89

Abkürzungen: „G“ = Insgesamt; „M“ = männliche Jugendliche; „W“ = weibliche Jugendliche.

Datenbasis: SOEP (1989-1994), eigene Längsschnittberechnungen.

## V. Ausblick

Wie schnell der Prozeß des Zusammenwachsens der Jugendgeneration Ost- und Westdeutschlands vonstatten geht, hängt ganz wesentlich davon ab, wie die Angleichung der Lebensbedingungen gelingt, da diese überhaupt erst vergleichbare Lebenserfahrungen ermöglicht.

Ein positives Signal auf diesem Weg ist, daß die ostdeutschen Jugendlichen ihre eigene Lebenssituation inzwischen weitgehend optimistisch einschätzen. Sie finden sich zunehmend besser in den neuen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n zurecht und machen sich weniger Sorgen um zentrale Lebensbereiche. Das vergleichsweise hohe Ausmaß an subjektivem Wohlbefinden ist sicher günstig für ihren weiteren Integrationsprozeß in die neue Gesellschaft und wird sich wohl auch von den Erfahrungen anderer (älterer) Bevölkerungsgruppen abheben. Die Fähigkeit Jugendlicher, sich rasch auf Neues einzustellen, und ihre hohe Flexibilität helfen ihnen, sich den neuen Bedingungen anzupassen und diese auch anzunehmen. Daß sich diese positiven Ansätze fortsetzen, bleibt zu wünschen.

Beunruhigend ist, daß sich die Situation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trotz des anhaltenden Wirtschaftsaufschwungs bislang kaum entspannt hat. Die Gefahr, daß nennenswerte Teile ostdeutscher Jugendlicher nach Beendigung ihrer Berufsausbildung oder ihres Hochschulstudiums zunächst in ein berufliches Vakuum fallen, ist keineswegs gebannt. Die möglichen Folgen von Arbeitslosigkeit haben viele bislang nicht betroffene Jugendliche bereits in ihrem Familienkreis erfahren müssen.

Nicht zu übersehen sind schließlich die ebenfalls auf die Arbeitslosigkeit zurückzuführenden Integrationsprobleme weiblicher Jugendlicher in Ostdeutschland. Weil sich unter den neuen Bedingungen Familie und Berufstätigkeit nur noch sehr schwer verwirklichen lassen, haben die jungen Frauen ihren Kinderwunsch bereits hinausgeschoben. Dessenungeachtet sind sie stärker als ihre männlichen Altersgenossen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문서 번호 50

첫 직장을 갖기 직전에: 동-서지역 직업교육생 청소년의 경험사례 및 관점들

1997 년

담당자 / 기관: 다그마 베어; 베른하르트 드레스바흐; 모나 그라나토; 클라우스 쉬바이케르트;  
연방직업교육원

내용:

이 문서는 연방직업교육원이 청소년의 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수 년간의 패널분석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목표는 직업교육 문제 및 관련 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그외 청소년의 정서와 규범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1992/93년에는 구동독지역 내 2,007 명의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으로 서독지역의 777 명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조사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과거 직업선택에 대한 의견,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및 기대, 사업체 내 학교 및 직업학교수업의 평가, 직업적 견해와 전망, 양친의 집와 가족의 의미.

출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 An der Schwelle zum Berufsleben: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von Auszubildend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 I. Vorbemerkungen

Bei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erlin (BIBB) wird derzeit eine mehrjährige Paneluntersuchung – Mehr-Wellen-Befragung – bei ostdeutschen Jugendlichen ausgewertet. Die Erhebung zielt auf die Analyse der Ausbildungsprobleme und -erfahrungen. Ermittelt werden aber auch Daten zu Befindlichkeit und zu normativen Strukturen der Jugendlichen<sup>1</sup>. Ein Vergleich mit westdeutschen Jugendlichen wird die Untersuchung abschließen. Im vorliegenden Beitrag werden einige zentrale Ergebnisse vorwiegend aus der dritten von insgesamt vier Erhebungswellen des Panels vorgelegt und in einer ersten Analyse mit Daten aus den früheren Wellen und mit einigen Befunden bei westdeutschen Jugendlichen – die Kontrollgruppe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umfaßt 777 Auszubildende – verglichen. Die Zahl der im Panel verbliebenen Befragten ist im Zeitraum von drei Jahren – wie vorausszusehen – stark gefallen, nämlich von 2 007 beim Start 1992/93 auf 696 bei der dritten Erhebung. Die Zahl von 696 Antworten bei der dritten Befragungswelle im

*In diesem Beitrag sind die Autoren für je folgende Abschnitte verantwortlich: Teil II Klaus Schweikert; Teil III Dagmar Beer; Teil IV Mona Granato; Teil V Bernhard Dresbach. Dieser Beitrag ist die leicht gekürzte Fassung des Zwischenberichts Nr. 5 aus dem Forschungsprojekt „Jugend und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in welchem die verwendeten statistischen Prüfverfahren dargelegt sind. Dagmar Beer/Bernhard Dresbach/Mona Granato/Klaus Schweikert, An der Schwelle zum Berufsleben –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von ostdeutschen Auszubildenden, hrsg.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Pressereferat, Berlin 1997.*

1 Es liegen bislang u. a. folgende Zwischenberichte vor: Dagmar Beer/Mona Granato/Klaus Schweikert, In der Mitte der Ausbildung – Auszubildend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rsg.), Presseferat, Berlin 1995; Dagmar Beer, Auszubildende und unversorgte Jugendliche – Ausbildungssituation und Fremdenfeindlichkeit –, Zwischenbericht Nr. 1 sowie Klaus Schweikert, Auszubildende und unversorgte Jugendliche – Ausbildungssituation und Ansichten zur Politik –, Zwischenbericht Nr. 2, beide: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rsg.), Berlin 1994.

Jahr 1995 reicht noch aus, um Befunde statistisch zu sichern. Die Panelmortalität, das heißt die Ausfallrate der Befragten im Verlauf des Panels, hat – so die Prüfung – keine nennenswerten Verzerrungen ergeben. Über diese Erhebung hinaus fanden 1996 Gruppendiskussionen mit den Jugendlichen statt, denen auch die Zitate im Text entstammen.

83 Prozent der befragten *ostdeutschen* Schulabgänger des Jahres 1992 hatten schon zum Zeitpunkt der (ersten) Befragung<sup>2</sup> einen Ausbildungsplatz; 17 Prozent standen damals nicht in einer Berufsausbildung.

**Tabelle 1: Aktueller Status Jugendliche OST in Prozent (Paneldaten 1. und 3. Welle)**

	3. Welle n = 696	1. Welle n = 1986
mache eine Lehre	84,8	83,2
gehe zur Schule	6,8	10,4
studiere	1,6	1,4
arbeite/jobbe	4,5	1,2
bin arbeitslos	0,9	1,2
bin bei der Bundeswehr	0,4	0,3
bin Zivildienstleistender	0,3	0,2
sonstiges	0,9	2,2
Total	100,0	100,0

Quelle: BIBB 1996.

Der Anteil der Jugendlichen in Ausbildung ist bis zur dritten Welle 1995 nur noch geringfügig um 1,6 Prozent gestiegen; der Prozentsatz der Schüler hat um 3,6 Prozent abgenommen. Jugendliche sind nun wesentlich häufiger bereits in Arbeit. Von den rund 15 Prozent, die letztlich keine Berufsausbildung erwerben, hatten die meisten (rund 70 Prozent) von vornherein keine Lehre beabsichtigt. Zur Zeit der dritten Erhebung suchten 18 Prozent aller im Panel verbliebenen Unversorgten noch ernsthaft nach einer Ausbildungsstelle. Circa 3,6 Prozent der Jugendlichen, die eine Ausbildung begonnen hatten, haben die Ausbildung von sich aus abgebrochen; zirka zwei Prozent der Auszubildenden sind auch im dritten Ausbildungsjahr noch

2 Sie fand zwischen Januar und März 1993 statt.

stark abbruchgefährdet; weitere 16 Prozent denken immerhin manchmal daran, die Ausbildung abzubrechen. Knapp ein Prozent waren nach der Probezeit entlassen worden, und 0,6 Prozent hatten die Abschlußprüfung nicht bestanden. Wer vor Beginn der Ausbildung die Möglichkeit einer Berufsberatung wahrgenommen hatte, brach weniger oft die Ausbildung ab: 3,5 Prozent – verglichen mit 7,3 Prozent Abbrecheranteil unter den Jugendlichen, die nicht bei der Berufsberatung gewesen sind. Den Ausbildungsberuf gewechselt hatten 4,1 Prozent der Auszubildenden, den Ausbildungsbetrieb dagegen mit 7,8 Prozent doppelt so viele. Während die Berufswechsel im Westen der Bundesrepublik mit 4,8 Prozent in derselben Größenordnung liegen, sind Betriebswechsel im Westen mit 11,5 Prozent<sup>3</sup> deutlich häufiger.

## II. Berufswahl, Ausbildungs- und Lebenszufriedenheit ost- und westdeutscher Jugendlicher

### 1. Berufswahl im Rückblick

82 Prozent der ostdeutschen Auszubildenden würden eine Ausbildung wieder im selben Beruf aufnehmen wollen, elf Prozent in einem anderen. Fünf Prozent würden lieber weiter zur Schule gehen, der Rest möchte etwas anderes machen oder gleich arbeiten. Die Zufriedenheit mit dem gewählten Beruf ist demnach hoch. Berufsausbildung scheint insgesamt geschätzt zu werden.

Diese Sicht wird relativiert durch die Antworten auf eine Frage zur Attraktivität der Berufsausbildung im Vergleich mit dem Besuch des Gymnasiums. Von den ostdeutschen Jugendlichen halten 59 Prozent die Berufsausbildung für mindestens gleichwertig; 36 Prozent schätzen sie sogar höher ein. Jungen (40 Prozent) sind häufiger der Meinung, die Berufsausbildung bringe ihnen mehr; von den Mädchen sagen dies nur 31 Prozent. Die Präferenz für eine Berufsausbildung wird hauptsächlich mit dem (rascheren) Verdienst begründet. Insbesondere die Jungen führen häufiger den Praxisbezug der Berufsausbildung als Grund der besonderen Wertschätzung einer Berufsausbildung an.

Vergleicht man die Antwortverteilung der Auszubildend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mit der

<sup>3</sup> Ergebnisse der Befragung einer Kontrollgruppe von 777 Auszubildenden im 3. Ausbildungsjahr in den alten Bundesländern.

aus der Erhebung der Kontrollgruppe von 777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benfalls im 3. Ausbildungsjahr), so ergibt sich:

**Tabelle 2: Vergleich Ausbildung – Gymnasium in Ost und West\* (in Prozent)**

	Ost n = 497	West n = 406
Meine derzeitige Ausbildung bietet mir mehr	36,2	33,0
Gymnasium würde mir mehr bieten	8,9	15,5
Beide bieten etwa gleich viel	23,1	18,2
Weiß nicht/kann ich nicht beurteilen	31,8	33,3
Total	100,0	100,0

\*) ohne Befragte mit Fach- und Hochschulreife  
Quelle: BIBB 1996.

Die Berufsausbildung wird in Ost und West gleichermaßen geschätzt. Das Gymnasium ist aber für die westdeutschen Auszubildenden vergleichsweise häufiger attraktiv als für die ostdeutschen.

### 2. Ausbildungszufriedenheit








Auch im dritten Ausbildungsjahr sind ost- und westdeutsche Jugendliche mit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noch überwiegend zufrie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äußern sich 86 Prozent positiv, noch deutlich mehr als bei der Kontrollgrupp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75 Prozent). Abgesehen von einem leichten Rückgang der Zufriedenheit nach dem ersten Ausbildungsjahr (erstes Ausbildungsjahr: 91 Prozent; zweites Ausbildungsjahr: 86 Prozent) ist damit die Zufriedenheit bei den Auszubilde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Ausbildungsverlauf insgesamt stabil geblieben. Auf die Frage: „Wie empfinden Sie den Besuch der Berufsschule?“ haben die Auszubildenden wie folgt geantwortet:

**Tabelle 3: Zufriedenheit mit der Ausbildung in der Berufsschule (3. Welle Ost)**

Antwort	Prozent n = 586
möchte lieber heute als morgen aufhören	1,2
fällt recht schwer	2,7
es geht, ist notwendiges Übel	26,3
es ist ganz gut	59,4
es macht richtig Spaß	10,4
Total	100,0








Quelle: BIBB 1996.

**Tabelle 4: Lebenszufriedenheit (3. Welle Ost) – in Prozent – (n = 695)**

							Total
1	2	3	4	5	6	7	
2,4	5,0	5,9	8,6	28,5	40,0	9,5	100,0

Quelle: BIBB 1996.

**Tabelle 5: Erwartungen für die nahe Zukunft nach Status (3. Welle Ost) – in Prozent –**

in Prozent-Zeile								Total
	1	2	3	4	5	6	7	
alle	1,0	3,3	6,9	12,6	26,6	37,7	11,8	100,0
in Ausbildung	0,5	2,0	7,3	12,6	26,1	39,0	12,4	100,0
auf Suche nach Stelle	8,7	21,7	17,4	8,7	26,1	17,4	–	100,0
nicht auf Suche	2,7	6,8	1,4	12,3	30,1	35,6	11,0	100,0

n = 692 (alle) bzw. 682 (nach Status)

Quelle: BIBB 1996.

70 Prozent der Jugendl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ind mit der Berufsschule (sehr) zufrieden. Das sind deutlich weniger als bei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7 Prozent fühlen sich von der Berufsschule *überfordert*, 10 Prozent dagegen *unterfordert*. Die große Mehrheit von 83 Prozent empfindet die Anforderungen in der Berufsschule als angemessen. Ungünstige Beurteilungen der Berufsschule sind auf *Überforderung* zurückzuführen. Unterforderung spielt statistisch keine Rolle. Nur 35 Prozent der Befragten beurteilen die Ausbildung im Betrieb und den Unterricht in der Berufsschule gleich gut bzw. schlecht.

### 3. Lebenszufriedenheit und Erwartungen

Für die Messung von Lebenszufriedenheit und Erwartungen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ist eine sprachfreie Gesichtsskala verwendet worden (vgl. die Tabellen 4 und 5):

78 Prozent aller in der dritten Welle – also 1995 – befragten Jugendlichen sind mit ihrem Leben – in Abstufungen – zufrieden. Unterschiede zwischen Mädchen und Jungen bestehen hier nicht.

Drei Viertel aller befragten Jugendlichen (76 Prozent) sind, was ihre nahe Zukunft angeht – also für den Zeitraum der nächsten zirka zwei bis drei Jahre –, optimistisch.

Zwischen Mädchen und Jungen sind bezüglich der Erwartungen keine Unterschiede feststellbar. Dagegen bestehen deutliche Differenzen zwischen Jugendlichen in Berufsausbildung und Jugendlichen, die keine Berufsausbildung machen. Am optimistischsten sind Jugendliche in Berufsausbildung, gefolgt von Jugendlichen, die keine Ausbildungsstelle suchen, weil sie in der Regel zur Schule gehen bzw. studieren oder arbeiten. Am wenigsten hoffnungsvoll sind Jugendliche, die (immer noch) eine Lehrstelle suchen.

Die aktuelle Lebenszufriedenheit der Befragten wird vorrangig von folgenden Faktoren bestimmt: *aktuelle Stimmungslage, Stimmung im Freundeskreis und in der Familie sowie Erwartungen für die nahe Zukunft*. Eine Faktorenanalyse über eine Frage-Antwort-Batterie mit 14 Items – also 14 Elementen eines Fragebogens oder einer Skala – zu den persönlichen Zielen der Jugendlichen ergab fünf verschiedene Typen von Jugendlichen:

- *Arbeits- und Einkommensorientierte* (Ziel: selbständige Arbeit mit großem Entscheidungsspielraum, interessante Arbeit, hohes Einkommen);
- *Freizeitorientierte Genießer* (viel Freizeit, viel genießen/angenehmes Leben);
- *Konformisten* (Anforderungen in Schule und Arbeit erfüllen, nicht aus der Reihe tanzen);

- Jugendliche, die nach Macht und Einfluß streben (jeweils Macht haben/sich politisch betätigen wollen);
- Altruisten (für andere Menschen da sein).

In welchem Umfang die Jugendlichen ihre persönlichen Ziele tatsächlich erreichen und inwieweit dies die Lebenszufriedenheit beeinflußt, kann erst nach Abschluß der Ausbildung ermittelt werden: Die schriftliche Nachbefragung der Panelteilnehmer nach dem Ausbildungsabschluß wird Hinweise dafür geben, inwieweit der von den Befragten hier formulierte Optimismus – hinsichtlich ihrer näheren Zukunft – eine reale Basis hatte.

### III. Ausbildungsproblem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1. Bewert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Auch wenn die Mehrzahl der befragten ostdeutschen Jugendlichen sowohl ihren Ausbildungsberuf als auch ihren Ausbildungsbetrieb noch einmal wählen würde, werden zum Teil erhebliche Probleme in der Ausbildung benannt, die jedoch von sehr vielen als gegeben akzeptiert werden. Die Kritik a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konzentriert sich bei den Befragten der neuen Bundesländer vorrangig auf die körperlich anstrengende Arbeit (über 50 Prozent gegenüber 20 Prozent bei Großbetrieben), autoritäre Entscheidungsstrukturen (36 Prozent) und auf das Problem von Überstunden (zirka 40 Prozent), was bei den Jugendlichen den Eindruck entstehen läßt, als billige Arbeitskraft ausgenutzt zu werden.

Alle drei Kritikpunkte betreffen in erster Linie die Ausbildung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Allerdings sehen die betreffenden Jugendlichen deutlich häufiger als Auszubildende in Großbetrieben eine Übernahmechance nach der Ausbildung. Während fast jeder zweite Auszubildende in Großbetrieben meint, nach der Ausbildung nicht übernommen zu werden, gilt dies für jeden fünften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Noch deutlicher wird diese Situation bei der Auswertung der direkten Frage nach der Übernahmechance im Anschluß an die Ausbildung. Zirka 30 Prozent der Auszubildenden in Kleinbetrieben gehen von einer sicheren Übernahme nach der Ausbildung aus, in Mittelbetrieben sind es knapp 20 Prozent und in Großbetrieben unter 10 Prozent.

Differenziert nach der Art des Betriebes zeigt sich, daß die Auszubildenden im Handwerk von der höchsten beruflichen Planungssicherheit ausgehen können. Von einer sicheren bzw. wahrscheinlichen Übernahme gehen hier 66 Prozent aus, gefolgt von den Jugendlichen im Öffentlichen Dienst (58 Prozent), in den Freien Berufen (52 Prozent), im Handel (49 Prozent), bei den Privaten Dienstleistungen (46 Prozent); das Schlußlicht bildet die Industrie mit 43 Prozent. Vor diesem Hintergrund ist die mangelnde Übernahmechance für 57 Prozent der Auszubildenden in industriellen Großbetrieben das Hauptproblem in der Ausbildung, was auch von jedem Dritten als störend empfunden wird.

Bei einer geschlechtsspezifischen Betrachtung der Ausbildungsprobleme ergeben sich drei nennenswerte Abweichungen zwischen männlichen und weiblichen Auszubildenden. Während für die jungen Männer die Ausbildung mit 52 Prozent körperlich sehr anstrengend ist (Frauen: 36 Prozent), klagen die jungen Frauen mit 26 Prozent überproportional häufiger über die nervliche Anstrengung der Ausbildung; bei den jungen Männern sind es 15 Prozent. Eine ähnliche Diskrepanz zeigt sich auch bei den Übernahmechancen. Wesentlich mehr Frauen (40 Prozent) als Männer (30 Prozent) klagen über geringe Chancen, nach der Prüfung vom Ausbildungsbetrieb in ein festes Arbeitsverhältnis übernommen zu werden. Dies ist bei den weiblichen Befragten der am häufigsten genannte Mangel i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dabei macht den jungen Frauen (32 Prozent) im Vergleich zu den jungen Männern (25 Prozent) die Ausbildung häufiger richtig Spaß.

Die mangelnde Abstimmung zwischen Betrieb und Berufsschule sowie das Gefühl, eine billige Arbeitskraft zu sein, wird dagegen von allen Auszubildenden unabhängig von der Betriebsgröße innerhalb der fünf häufigsten Kritikpunkte benannt, wenn auch mit jeweils unterschiedlicher Gewichtung. Analysiert man die von den Auszubildenden formulierten „Mißstände“ vor dem Hintergrund der Frage, wie störend sie dies jeweils empfinden, zeigt sich eine hohe Bereitschaft, Belastungen auf sich zu nehmen und negative Erfahrungen in der Ausbildung zu akzeptieren. Auffällig ist die hohe Bereitschaft, Belastungen – wie zum Beispiel körperliche Anstrengungen, Überstunden etc. – zu akzeptieren und diese nicht als störend zu empfinden. Als Störfaktoren werden in einem nennenswerten Umfang von den Auszubilde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ur drei Mängel genannt: die Ausnutzung als billige Arbeitskraft (28 Prozent), die mangelnde Abstimmung zwi-

schen Betrieb und Berufsschule (23 Prozent) sowie die schlechten Übernahmechancen nach der Ausbildung (22 Prozent). Nur dort, wo die inhaltliche Qualifizierung selbst gefährdet ist oder aber die Jugendlichen ihre beruflichen Perspektiven bemängeln, wird die Ausbildungssituation als persönlich belastend empfunden.

Daraus erklärt sich auch der hohe Anteil von knapp 40 Prozent der Auszubildenden, die keine Verbesserungen in der gesamten Ausbildung für nötig halten. Verbessern bzw. erhöhen sollten sich allerdings nach Meinung der Befragten vorrangig die Bezahlung, der Praxisanteil, der Anteil von Eigenverantwortung und Kreativität an der Ausbildung, das Betriebsklima sowie die Organisation der Ausbildung, die gestrafft werden sollte.

Anzumerken ist, daß sich insbesondere die Auszubildenden in den Bereichen des Handwerks und der Privaten Dienstleistungen eine bessere Bezahlung wünschen. Diese Forderung steht bei ihnen mit weitem Abstand vor allen anderen genannten Verbesserungswünschen.

Bezogen auf die Inhalte im betrieblichen Ausbildungsteil monieren Auszubildend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ähnlich wie Jugendlich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eine mangelnde Förderung der Kreativität (40 Prozent), der Kritikfähigkeit (38 Prozent), der Eigeninitiative (37 Prozent), bei gleichzeitig mangelnden Möglichkeiten der selbstständigen Arbeit (32 Prozent) und des Umgangs mit modernen Technologien (43 Prozent). Klassische Arbeitstugenden – wie die Bereitschaft sich unterzuordnen, Pünktlichkeit, Disziplin, Ordnungssinn etc. – scheinen nach Angaben der Jugendlichen tendenziell im Vordergrund zu stehen<sup>4</sup>. Die hier referierte Bewertung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ist unabhängig vom Geschlecht, von der Betriebsgröße, der Art des Betriebes und seiner Organisationsform zu sehen. Allerdings beklagen insbesondere die handwerklichen Auszubildenden mit 49 Prozent den mangelnden Umgang mit moderner Technologie. Unabhängig von dieser Kritik a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beurteilen die Auszubildenden das soziale Betriebsklima überwiegend positiv<sup>5</sup>. Drei Viertel der Befragten schätzen das Betriebsklima und das

4. Damit werden ähnliche Kritikpunkte genannt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gl. Gisela Feller, Ansprüche und Wertungen junger Menschen in der Berufsausbildung – wie und was Auszubildende (nicht) lernen wollen,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1995) 2, S. 21.

5. „weniger gut“ bzw. „schlecht“ wurden nur von sechs Prozent der Auszubildenden genannt. Damit ist hier eine deutlich positivere Bewertung gegeben als in der schriftlichen Befragung. Vgl. Heidrun Tuschke/Joachim Ulrich, Probleme

Verhältnis zu den unmittelbaren Vorgesetzten bzw. zum Ausbilder als „(sehr) gut“ ein. Noch günstiger wird das Verhältnis zu den anderen Kollegen bzw. Auszubildenden beschrieben. Fast 90 Prozent bezeichnen dies als „(sehr) gut“.

Auszubildend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werten das soziale Klima im Betrieb in allen Bereichen deutlich besser als die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on denen nur 63 Prozent das Betriebsklima als „(sehr) gut“ einschätzen. Das Verhältnis zu Vorgesetzten wird mit 55 Prozent, zu Kollegen mit 77 Prozent und zu anderen Auszubildenden mit 83 Prozent positiv bewerte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fällt auf, daß das Betriebsklima in Großbetrieben am Ende der Ausbildung tendenziell schlechter als in Kleinbetrieben eingeschätzt wird. Bewerten bspw. 25 Prozent der Auszubildenden in Kleinbetrieben das Betriebsklima als „sehr gut“, so beträgt der entsprechende Wert in Großbetrieben nur 6 Prozent. Ähnlich ist die Situation beim Verhältnis der Auszubildenden zum unmittelbaren Vorgesetzten/Ausbilder. Demgegenüber sind die Unterschiede im Verhältnis zu anderen Kollegen/Auszubildenden nicht so ausgeprägt. Am besten wird das Betriebsklima von den Auszubildenden im Handwerk (sehr gut: 23 Prozent) bewertet (Industrie: 6 Prozent; Handel 9 Prozent).

Insgesamt ist gegen Ende der Ausbildung durchgängig eine Ernüchterung festzustellen. Die Euphorie weicht einer nüchternen Betrachtung der Ausbildungssituation. Extrem positive bzw. negative Bewertungen des Betriebsklimas sowie des Verhältnisses zu anderen Betriebsangehörigen haben sich zwischen der zweiten und der dritten Erhebungswelle erheblich reduziert. Aussteigen wollen die Jugendlichen allerdings nicht; die Mehrzahl hat noch nie an einen Ausbildungsabbruch gedacht und wünscht sich, noch in zehn Jahren im Ausbildungsberuf zu arbeiten.

## 2. Bewertung des Berufsschulunterrichts

Im Vergleich zum betrieblichen Teil der Berufsausbildung bewerten die Auszubildenden sowohl in den alten als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n Berufsschulunterricht deutlich schlechter, was bis zur totalen Ablehnung reicht:

*„Es wiederholt sich viel, was man in der Praxis und in der Schule macht. Das ist verschenkte Zeit.“*

während der Ausbildung – Kritikpunkte von ostdeutschen Jugendlichen, in: Sozialwissenschaften und Berufspraxis, 18 (1995) 3, S. 206 f.

„Ich habe meinem Ausbildungsbetrieb viel zu verdanken, im Gegensatz zur Berufsschule... Die Lehrer konnten den Stoff nicht vermitteln.“

Im Zusammenhang mit dem Unterricht in der Berufsschule wird von 45 Prozent der Befragten insbesondere ein mangelnder Anteil an Fremdsprachen beklagt, gefolgt von schlechter Prüfungsvorbereitung (32 Prozent), fehlendem Sportunterricht (26 Prozent) und schlechter Fachkundeausbildung (20 Prozent).

Im Vergleich zur zweiten Erhebungswelle ist in allen Fächern der Anteil der Auszubildenden gestiegen, die durchgängig eine ausreichende Vermittlung der jeweiligen Fachinhalte durch die Berufsschule sehen. Da davon auszugehen ist, daß sich die Lehrpläne der Berufsschulen nicht wesentlich geändert haben – also die Anteile des Fremdsprachen- und Sportunterrichts nicht wesentlich gestiegen sind –, ist zu vermuten, daß sich ein großer Teil der befragten Auszubildenden mit den von ihnen noch in der Mitte der Ausbildung formulierten Mängeln abgefunden hat. Im Vergleich zu den Jugendlichen der Westbefragung zeigt sich, daß die Auszubildenden der alten Bundesländer mit Ausnahme des (Fach-)Rechnens häufiger über zu geringe Zeitanteile in allen übrigen Fächern klagen.

Tendenziell geht allerdings aus den Aussagen hervor, daß männliche Auszubildende Sportunterricht mit 30 Prozent eher vermissen als weibliche. Ebenfalls ist als Tendenz festzustellen, daß Jugendliche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häufiger über zu geringe Zeitanteile für den Fachkundeunterricht an Berufsschulen klagen als Jugendliche in Großbetrieben. Hintergrund dafür könnte der in Großbetrieben häufig durchgeführte Werksunterricht sein, der mit seinem Schwerpunkt auf unter anderem Fachkunde mangelnde Zeitanteile in der Berufsschule kompensieren kann. Auszubildende in Klein- und Mittelbetrieben sind demgegenüber meist ausschließlich auf die Vermittlung von Fachkenntnissen in der Berufsschule angewiesen.

Interessant ist weiterhin, daß die Auszubildenden im Öffentlichen Dienst und bei den Privaten Dienstleistungen weniger häufig über mangelnden Fremdsprachenunterricht klagen. Die Unterschiede zu den übrigen Ausbildungsbereichen betragen bis zu 18 Prozentpunkte. Offensichtlich findet in diesen Ausbildungsbereichen eher eine Fremdsprachenvermittlung bzw. -förderung statt.

Ein Jahr nach der Ausbildung wird der Nutzen der betrieblichen Ausbildung deutlich höher eingestuft als der der Berufsschule. Junge Erwachsene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schreiben ihrer Ausbildung tendenziell einen höheren Nutzen zu als die Befragten in Ostdeutschland; arbeitslose Befragte bewerten den Nutzen der Ausbildung am niedrigsten und würden häufig auch einen anderen Ausbildungsberuf wählen.

---

## IV. Berufliche Vorstellungen und Perspektiven von Auszubildenden in Ost und West

---

### 1. Berufliche Wünsche und Vorstellungen

„Auf Dauer kann ich mir nicht vorstellen, nur zu Hause zu sein... Auch eine Weltreise geht mal zu Ende.“ (m, Ost).

„Bei uns in der Firma spielen zur Zeit alle Lotto. Wenn ich im Lotto gewinnen würde, würde ich das gar nicht erzählen. Und dann wäre ich so ehrgeizig, in meinem Beruf erst einmal weiter zu kommen (...).“ (w, Ost).

Arbeit und Beruf haben in der Lebensplanung von Auszubildenden in Ostdeutschland einen zentralen Stellenwert. Im dritten Ausbildungsjahr können sich 61 Prozent der jungen Frauen und 55 Prozent der jungen Männ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Grunde genommen ein Leben ohne Arbeit gar nicht vorstellen. Im Vergleich dazu äußern westdeutsche Jugendliche häufiger mehr „innere Distanz“ zur Berufsarbeit: 58 Prozent können sich durchaus ein Leben ohne Arbeit – bei gegebener materieller Absicherung – vorstellen, ohne Unterschiede nach Geschlecht; die Hälfte der Auszubilden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hegt den Wunsch, eine Zeitlang nicht zu arbeiten (m: 50 Prozent, w: 56 Prozent), was für lediglich 21 Prozent der jungen Frauen und 29 Prozent der jungen Männer in Ostdeutschland in Frage kommt. Auch eine vorübergehende Familienpause und einen zeitweiligen Rückzug aus der Berufsarbeit lehnen angehende Fachkräfte im Osten weitgehend ab, insbesondere dann, wenn damit die Idee, auszusteigen und ein alternatives Leben zu beginnen, verknüpft ist<sup>6</sup>.

Die Vorstellungen ostdeutscher Jugendlicher über Beruf und Berufswelt haben sich im Ausbildungsverlauf gefestigt. An erster Stelle steht dabei die

<sup>6</sup> Wünschenswert: „sich vorübergehend dem Privatleben/der Familie widmen“ 26 Prozent (m: 18 Prozent, w: 38 Prozent), „aussteigen und ein alternatives Leben beginnen“ 12 Prozent (m: 14 Prozent, w: 9 Prozent).



**Tabelle 6: Welche Erwartungen haben Sie, wenn Sie an Ihr künftiges berufliches Leben denken?  
(3. Ausbildungsjahr Ost und West – in Prozent –)**

sehr wichtig:	Ost			West		
	Alle	m	w	Alle	m	w
überhaupt eine Arbeit zu bekommen?	79	80	77	57	54	60
daß Ihr Arbeitsplatz auf alle Fälle gesichert ist?	79	77	83	55	59	50
daß Ihnen Ihre Arbeit Spaß macht?	75	72	79	65	63	67
daß Sie später mit Ihrem Arbeitsplatz zufrieden sind?	71	68	75	62	61	62
daß Sie gut bezahlt werden?	73	72	74	53	59	46
daß Sie Ihre Arbeit gut machen?	68	65	71	54	53	55

Quelle: BIBB 1996.

Erwartung, überhaupt eine Arbeit zu finden – und, wenn möglich, einen sicheren Arbeitsplatz. Spaß und Zufriedenheit werden erst in zweiter Linie als wünschenswert bewertet, von weiblichen Auszubildenden tendenziell häufiger als von männlichen Auszubildenden. Demgegenüber rangieren bei den angehenden Fachkräften im Westen Sicherheits-, Reproduktions- und Leistungskriterien erst auf Platz zwei nach persönlichen Sinnkriterien wie Spaß an und Zufriedenheit mit der Arbeit.

*„Ich könnte mir auch vorstellen, meinen Beruf (Bankkaufmann) bis zur Rente zu machen... Wenn sich eine Chance zur Weiterbildung ergibt oder Aufstiegschancen, würde ich das sicherlich auch nutzen...“ (m, Ost).*

Weitgehend unverändert über den Ausbildungsverlauf hinweg ist mit 85 Prozent der Wunsch von Auszubilde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 Weiterbildung soweit wie möglich nach oben zu kommen (erstes Ausbildungsjahr: 92 Prozent). Dies halten westdeutsche Jugendliche etwas seltener für erstrebenswert (70 Prozent). Für eine große Mehrheit der Auszubildenden in West- und Ostdeutschland ist die berufliche Kontinuität eine wünschenswerte Perspektive, wobei auch hier der Anteil Jugendlicher, die diesen Wunsch hegen, im Osten größer ist: „In meinem Ausbildungsberuf auch noch in zehn Jahren (zu) arbeiten“, wünschen sich 75 Prozent der jungen Ost- und 65 Prozent der jungen Westdeutschen. Während Jugendliche in Westdeutschland Berufsarbeit mit dem Wunsch nach einer Reduzierung der Wochenarbeitszeit verknüpfen – zwei Drittel der Westjugendlichen befürworten den Wunsch nach einer Teilzeitstelle (m: 60 Prozent, w: 68 Prozent) –, halten weibliche und männliche Auszubildend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Teilzeitarbeit im dritten Ausbildungsjahr erheblich seltener für eine wünschenswerte Perspektive (m: 47 Prozent, w: 45 Prozent). Für die Mehrheit der Jugend in Deutschland ist übrigens „ein Beruf als Selbständiger“ kein „Traum“:

Auszubildende in Ost und West, durch ihre Ausbildung mit der beruflichen Realität konfrontiert, halten dies am Ende ihrer Ausbildung deutlich seltener für persönlich wünschenswert als noch im zweiten Lehrjahr („mich selbstständig machen“ wünschenswert, 3. Ausbildungsjahr Ost: 40 Prozent; West: 48 Prozent; 2. Ausbildungsjahr Ost: 57 Prozent).

Insgesamt bleibt festzuhalten, daß bei Auszubildend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an Sicherheit, Kontinuität und Aufstieg ausgerichtetes Verständnis von Beruf dominiert, verbunden mit einer Vorstellung von Arbeit, die sich an der Existenzsicherung sowie an der Arbeitsfreude orientiert. Demgegenüber soll bei Auszubildenden in Westdeutschland die Berufsarbeit den eigenen inhaltlichen Ansprüchen genügen und zudem die materielle Existenz absichern.

## 2. Berufliche Perspektiven

Am Ende des dritten Ausbildungsjahres geht eine knappe Mehrheit der Auszubildenden in Ostdeutschland davon aus, von ihrem Ausbildungsbetrieb übernommen zu werden. Doch nur jede(r) fünfte rechnet fest mit einer Übernahme. Die übrigen Jugendlichen nehmen an, daß sie – wahrscheinlich bzw. sicher – nicht übernommen werden (24 Prozent) oder sie sind sich ihrer Übernahmekancen ungewiß („weiß nicht“ 19 Prozent). Unterschiede zwischen Mädchen und Jungen in der Einschätzung der Übernahme im Betrieb sind signifikant: Mit 18 Prozent liegt der Anteil der Mädchen, die davon ausgehen, auf keinen Fall übernommen zu werden, doppelt so hoch wie bei den Jungen (w: 18 Prozent, m: 9 Prozent). Der Anteil der männlichen Jugendlichen, der von einer sicheren bzw. wahrscheinlichen Übernahme ausgeht, liegt mit 60 Prozent deutlich über den Übernahmeerwartungen der weiblichen Auszubildenden (52 Prozent).

Im Vergleich zu männlichen Jugendlichen erhalten junge Frauen überproportional häufig eine außerbetriebliche Ausbildung, die von vornherein eine direkte Übernahmemöglichkeit ausschließt (m: 8 Prozent; w: 18 Prozent). Nur 17 Prozent der jungen Frauen, die hier ausgebildet werden, gehen davon aus, – sicher oder wahrscheinlich – eine Anstellung als Fachkraft zu finden, während 60 Prozent der (männlichen und weiblichen) Jugendlichen, die eine betriebliche Ausbildung erhalten, damit rechnen<sup>7</sup>. Das dritte Ausbildungsjahr hat – im Hinblick auf die Übernahme für die Jugendlichen – keine größere Planungssicherheit gebracht: Die Übernahmeerwartungen haben sich seit der Befragung im zweiten Ausbildungsjahr nicht wesentlich vergrößert.

Auch Auszubildende in Westdeutschland äußern sich vergleichsweise pessimistisch zu ihren Übernahmechancen: 22 Prozent der Jugendlichen gehen von einer „sicheren“, 38 Prozent von einer „wahrscheinlichen“ Anschlußbeschäftigung aus. 8 Prozent wissen und 13 Prozent vermuten, daß sie nicht übernommen werden, während jeder fünfte sich ungewiß ist.

Optimistische bzw. pessimistische Erwartungen wirken sich bei Jugendlichen in Ost und West unterschiedlich auf ihre Gemütslage und ihre Lebenszufriedenheit aus. Obgleich Jugendlich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in ihren Einstellungen und Bewertungen eine größere Distanz zu Arbeit und Beruf kundtun, sind sie von schlechten Berufsaussichten emotional stärker betroffen als Jugendliche in den neuen Ländern. Diese sind in ihrer Wertehaltung zwar deutlich stärker an Arbeit und Beruf orientiert, lassen sich aber von ungünstigeren Berufsaussichten weniger schnell in ihrem allgemeinen Wohlbefinden beeinflussen. Dies könnte auch damit in Zusammenhang stehen, daß Jugendlich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eits seit der Wende mit einer hohen Arbeitslosigkeit und schlechten Arbeitsmarktchancen in ihrer Umgebung konfrontiert sind.

Berufsarbeit steht bei ostdeutschen Auszubildenden auf Platz eins ihrer Lebensziele: Die hohe Zustimmung zu sicherheits- und leistungsorientierten Werten wird vor dem Hintergrund ihrer Erfahrungen im Transformationsprozeß nachvollziehbar. Auch wenn westdeutsche Auszubildende diese

7 Zu klären ist, inwieweit die geringere Einschätzung der Übernahmechancen durch Frauen sich auf den signifikant höheren Anteil von Frauen in einer außerbetrieblichen Ausbildung zurückführen läßt oder ob darüber hinaus eine zusätzliche, geschlechterdifferenzierende Beurteilung der Übernahmeperspektiven existiert.

Wertung nur bedingt teilen, so zeigt sich an ihrem emotionalen Umgang mit pessimistischen bzw. unsicheren beruflichen Zukunftsaussichten, daß Berufs- und Erwerbsarbeit auch in ihrem Leben eine zentrale Bedeutung haben.

*„Den Raum Rostock und Mecklenburg-Vorpommern kann man total vergessen als Bürokauffrau. Ich habe mich jetzt in Hamburg und Berlin beworben und heute hat mir das Arbeitsamt eine Stelle in M. vermittelt. . . Das ist ein bißchen weit weg. Ich würde schon hingehen, es bleibt einem ja nichts anderes übrig, nach einem Jahr Arbeitslosigkeit möchte ich gerne eine Stelle haben, egal wo.“ (w, Ost).*

Angehende Fachkräf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ehmen die zu erwartenden, zum Teil geringen Übernahmechancen in eine qualifizierte Berufstätigkeit nicht resigniert hin, sondern versuchen, sich flexibel auf die von ihnen eingeschätzten Berufsaussichten einzustellen und entwickeln (gezwungenermaßen) alternative Handlungsperspektiven, um den schwierigen Übergang ins Berufsleben zu meistern. Dabei hat, neben Überlegungen zu einer Verlängerung der Bildungs- bzw. Qualifizierungsphase auch die Möglichkeit eines Wohnortwechsels eine Bedeutung.

Ostdeutsche Auszubildende, die davon ausgehen, keine – bzw. wahrscheinlich keine – Arbeitsstelle in ihrem Ausbildungsbetrieb zu erhalten, sind signifikant häufiger als Jugendliche mit positiver Übernahmeperspektive bereit, aus beruflichen Erwägungen nach Westdeutschland zu gehen. Die höhere innerdeutsche Mobilitätsbereitschaft der Jugendlichen mit pessimistischen Berufsaussichten bezieht sich allerdings nur auf Ost-West-Wanderungen: Von einem Umzug innerhalb der neuen Bundesländer versprechen sich die Jugendlichen keine Verbesserung ihrer Arbeitsmarktchancen.

Umgekehrt werden von westdeutschen Auszubildenden West-Ost-Wanderungen nur selten erwogen. Für 58 Prozent kommt ein Umzug in die neuen Länder aus beruflichen Erwägungen grundsätzlich nicht in Frage. Bei dieser Ablehnung spielen Übernahmeerwartungen kaum eine Rolle, denn auch (westdeutsche) Jugendliche mit pessimistischen<sup>8</sup> Übernahmeerwartungen lehnen einen beruflich bedingten Umzug in die neuen Länder ab (60 Prozent); lediglich 12 Prozent von ihnen würden auf jeden Fall, weitere 28 Prozent „vielleicht“ aus beruflichen Erwägungen in die neuen Bundesländer gehen, das heißt, innerdeutsche

8 Hier werden „wahrscheinlich nicht“ und „nein“ zusammengefaßt.

Mobilität bietet für die Mehrheit keine Handlungsalternative, um den Übergang an der zweiten Schwelle doch noch erfolgreich zu bewältigen.

*„Man hat die Prüfung bestanden, freut sich, und am nächsten Tag war ich arbeitslos. Die Sprüche vom Vermittler: ‚Nicht den Mut verlieren... Den meisten von uns fehlt die Berufserfahrung, die sie alle wollen.‘“ (w, Ost).*

Die pessimistischeren Erwartungen der Mädchen hinsichtlich ihrer Berufsstartchancen erweisen sich als realitätsnahe Einschätzung<sup>9</sup>. Vergleicht man diese mit Untersuchungsergebnissen zur Lage junger Fachkräfte am Übergang zwischen Ausbildung und Beruf, so zeigt sich, daß die geäußerten Erwartungen zu optimistisch sind: Rund 40 Prozent der ostdeutschen Ausbildungsabsolventen des Jahres 1993 konnten eine Beschäftigung als Fachkraft finden, der gleiche Anteil wurde nach Abschluß der Ausbildung arbeitslos<sup>10</sup>. 1995 wurde über ein Drittel der ostdeutschen Ausbildungsabsolventen nach der Lehre arbeitslos; auch 1996 hat sich die Lage nicht entspannt, sondern entwickelt sich für die Jugendlichen noch ungünstiger<sup>11</sup>. Es ist davon auszugehen, daß die berufliche Motivation der jungen Fachkräf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insbesondere in den neuen Ländern – und die Übernahmeangebote bzw. die tatsächlich vorfindbaren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deutlich auseinanderklaffen. Das heißt, die beruflichen Integrationschancen entsprechen bei weitem nicht dem beruflichen Engagement und dem Stellenwert, den der Beruf im Leben Jugendlicher einnimmt.

## V. Bedeutung von Elternhaus und Familie

In der ersten Welle im Jahre 1992/93 wurden alle Teilnehmer des Panels danach gefragt, wie sie denn die häuslichen, familiären Verhältnisse, in

9 Vgl. Joachim-Gerd Ulrich, Verbleib ostdeutscher Ausbildungsabsolventen nach Abschluß der Lehre, hrsg. vom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Pressereferat, Berlin 1996.

10 Die anderen Fachkräfte arbeiteten in einer Anlern-tätigkeit (4 Prozent), nahmen eine neue Ausbildung (1 Prozent) oder ein Studium (2 Prozent) auf, beteiligten sich an Fortbildung (1 Prozent); 2 Prozent leisteten ihren Zivil- bzw. Bundeswehrdienst ab. Vgl. Joachim-Gerd Ulrich/Gisela Westhoff, Die Ausbildung absolviert, den Umbruch auch? Zum Verbleib junger Fachkräfte,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in: Berufsbildung in Wissenschaft und Praxis, (1994) 4, S. 17 f.

11 Vgl. J.-G. Ulrich (Anm. 9).

denen sie aufgewachsen sind, in Erinnerung haben. Die große Mehrzahl der ostdeutschen Befragten<sup>12</sup>, nämlich 89 Prozent, charakterisierte ihre familiären Verhältnisse als harmonisch oder sogar sehr harmonisch. Nur 7 Prozent fanden dies nicht so. 4 Prozent haben ein eher gespanntes und konfliktbeladenes Zuhause in Erinnerung. Dieses Ergebnis bestätigt den Eindruck des besonderen Stellenwerts der Familie in der DDR, wie er in anderen Untersuchungen schon herausgestellt werden konnte.

Zum Zeitpunkt der dritten Welle im Jahr 1995 wohnten noch immer vier von fünf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bei den Eltern. Verschiebungen in den anderen Kategorien der Wohnfrage ergaben sich zugunsten einer eigenen Wohnung bzw. des Zusammenwohnens mit einem/einer festen Freund/Freundin. Schon 1992/93, beim Start des Panels, hatte die DDR-typische Unterbringung in Lehrlingswohnheimen kaum noch eine Rolle gespielt. Alterstypisch nabeln sich junge Frauen auch räumlich eher von den Eltern ab, während die jungen Männer häufig erst noch den abzuleistenden Wehr- bzw. Zivildienst abwarten.

### 1. Die Wertschätzung der Eltern

Überlieferte jugend- und entwicklungstheoretische Ansätze, nach denen zum Beispiel rapider sozialer Wandel zu einer Potenzierung von Generationskonflikten führen müsse, da die jungen Generationen befähigter zur Aufnahme von Innovationen seien, während die Älteren eher zur Verteidigung von Traditionen neigten und durch Wandel verunsichert würden<sup>13</sup>, sind auf die Situation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nur bedingt übertragbar. Von den Jüngeren werden die Innovationen der vergangenen fünf Jahre, auch wenn sie mit Friktionen verbunden sind, überwiegend begrüßt und akzeptiert. Mehr als 90 Prozent der hier Befragten stimmten etwa Parolen, die die „gute alte Zeit“ heraufbeschwören, fast einstimmig nicht zu (z. B.: „Vor der Wende war alles besser“ – 93 Prozent Ablehnung; „Man sollte die Mauer wieder aufbauen“ – 98 Prozent Ablehnung; „Freiheit durch die Wende hat mir nichts gebracht“ – 90 Prozent Ablehnung). Doch – so sehr die alten Verhältnisse hier abgelehnt werden, so sehr ist zu beachten, daß das Verhältnis zu den neuen, westlich-demokratischen Verhältnissen keineswegs gefestigt ist. So meinen zum Beispiel 37 Prozent, daß „die Demo-

12 Für diesen Teil des Berichts sind alle (n = 696) Befragten der 3. Welle (Ost) die Basis.

13 Vgl. Hartmut M. Gries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theorien. Eine Einführung, Weinheim – Basel 1977.

kratie nicht unsere Probleme löst“, und gar 45 Prozent stimmen der Aussage zu, daß „ein starker Mann her muß, um die Probleme zu lösen“.

Vertrauen und Wertschätzung der Eltern, aber auch anderer sozialer Bezugspersonen der Jugendlichen lassen sich zum Beispiel durch die Akzeptanz dieser Personen als Vertrauens- und Beratungspartner messen. Die Panelteilnehmer wurden in der zweiten und dritten Befragungswelle jeweils danach gefragt, mit welcher Person ihres Vertrauens sie zum einen schulisch-berufliche Probleme, zum anderen solche privater Natur meistens bereden.

Im Ergebnis ist festzuhalten, daß den Vätern offensichtlich zunehmend weniger Kompetenz zugebilligt wird. Waren es 1994 noch 19 Prozent der Jugendlichen, die sich mit ihren *schulischen Problemen* an die Väter wandten, so sank der Anteil ein Jahr später auf 14 Prozent. Relativ stabil blieb der Anteil der der Mutter zugestandenen Kompetenz in diesen Fragen. 1995 waren es knapp 30 Prozent, etwas mehr noch als im Vorjahr. Mitschülern und Kollegen kommt im Verlauf der Erhebung mehr Bedeutung in der Beratung beruflicher und schulischer Fragen zu, 1994 bereits 23 Prozent, ein Jahr später 26 Prozent. Dagegen bleibt der erstaunlich geringe Anteil Jugendlicher, die ihren Lehrern bzw. Vorgesetzten, Meistern und Ausbildern schulische und berufliche Beratungskompetenz zugestehen, fast konstant. Zunehmend wird der feste Freund/die feste Freundin als Beratungsinstanz in Anspruch genommen (1995 von 18 Prozent). Sonstige Personen, damit sind zum Beispiel Geschwister und Großeltern aber auch der Gemeindepfarrer gemeint, haben nur eine geringe Bedeutung.

Ein anderes Bild ergibt sich bei Betrachtung der Antworten auf die Frage nach der Beratungskompetenz bei *privaten Problemen*. Hier dominiert eindeutig die mütterliche Beratungskompetenz, mit steigender Tendenz (1995: 41 Prozent), insbesondere bei den jungen Frauen. 30 Prozent vertrauen ihrer/ihrer festen. Freund/Freundin am meisten. Der väterliche Rat ist eher nicht erwünscht. Nur etwa jeder dreizehnte Jugendliche wendet sich in privaten Dingen an ihn. Auch den meist gleichaltrigen Mitschülern bzw. den Kollegen wird wenig private Beratungskompetenz zuge-  
traut, ebenso Lehrern und Vorgesetzten.

Der sinkende Anteil der väterlichen Beratungsakzeptanz und der eher marginale Anteil, welcher

den Beratungsinstanzen in Schule und Beruf zugestanden wird, ist zumindest bemerkenswert. Hinter diesem Ergebnis lassen sich Konfliktpotentiale zwischen den Jugendlichen und den männlichen Vertretern der älteren Generationen, die ja auch meist die Leistungsträger der alten Gesellschaftsform waren, vermuten. Eine Besonderheit stellt die Beziehung der ostdeutschen Jugendlichen zur Mutter dar, auch im Vergleich mit den Einstellungen der in der Kontrollgruppe befragten westdeutschen Jugendlichen<sup>14</sup>. Deutlich wird aber, daß – vom mütterlichen Rat abgesehen – die ostdeutschen Jugendlichen sich eher untereinander beraten – sowohl bei beruflich-schulischen als auch in privaten Fragen – und daß sie einander mehr Vertrauen entgegenbringen als den Vertretern der älteren Generationen.

## 2. Trotzdem: Ein gutes Verhältnis zu den Eltern

Eine solche Abnahme des Vertrauens und wohl auch der Vorbildfunktion der älteren Generationen bei den ostdeutschen Jugendlichen ist sicherlich ein Indiz für die zunehmende Sicherheit der Jugendlichen im Umgang mit den neuen Lebensverhältnissen, zeugt aber auch davon, daß die hier befragten jungen Frauen und Männer sowohl Realitätssinn als auch eine gehörige Portion Selbstvertrauen besitzen, und daß sie ihre Lebensverhältnisse differenziert betrachten können. So ist es denn auch nicht weiter verwunderlich, daß sie *das* Verhältnis zu ihren Eltern überwiegend *positiv* einschätzen (Väter: 76 Prozent, Mutter: 85 Prozent). Es ist eben *eine* Sache, neue Handlungsstrategien und neue Lebenspläne unter den *neuen* Verhältnissen zu entwerfen, mit denen die *Älteren* – die Eltern – vielleicht weniger gut *zurechtkommen*. Eine *andere* Sache ist es, trotzdem ein *gutes* Verhältnis zu ihnen zu haben, weil es eben *die* Eltern sind, mit denen man überwiegend *noch* unter einem Dach zusammenlebt und *auskommen* will.

14 Ein direkter Vergleich verbietet sich, da die Struktur der westdeutschen Kontrollgruppe nicht voll vergleichbar ist. So sind z. B. rund 40 Prozent der westdeutschen Befragten bereits in der Altersklasse 20 Jahre und älter, während 90 Prozent des Ost-Panels in der Altersklasse bis 19 Jahre sind. Auch ist der Abiturientenanteil in der West-Erhebung mit rund 20 Prozent fast zehnmal höher als im Ost-Panels. Aber auch, wenn man diese Unterschiede berücksichtigt, bleibt bestehen, daß die mütterliche Kompetenz von den westdeutschen Jugendlichen nur halb so hoch eingeschätzt wird wie von den ostdeutschen.

문서 번호 51

동·서독 주민의 직업교육 및 고용

1997 년

담당자 / 기관: 마르크 쉬들릭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치교육원이 발행하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통일 이후 독일 동서지역 주민들 간에 직업자격능력과 업무상 기대능력치, 직업교육 적합성의 일치 내지 불일치의 정도와 그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지역 주민 간에는 직업교육과 일자리에 확연한 격차가 존재한다. 현재 갖고 있는 직업에 부적합하다고 조사된 구동독 주민들의 대다수는 일자리보다 능력이 초과되는 상태였으며 자신의 직업적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과 부적합한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주는 결과를 보면 동서지역 간에 더욱 큰 차이가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에 직업능력에 부적합하게 고용된 경우가 더 많다. 구동독지역의 피고용자들은 서독지역의 피고용자보다 더 자주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부담과 함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급여도 감수하고 있다.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로 인해 구동독지역 주민 중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그것은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능력이 통일된 독일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구동독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은 비교적 그에 상응하는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다. 그와 달리 특별한 직업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의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출처: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97



#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 von Ost- und Westdeutschen

---

## I. Vorbemerkungen

---

Ausbildung ist eine zentrale Dimension von sozialen Ungleichheiten. Sie hat einen Wert an sich, wenn sie beispielsweise mit besonderen Eigen- und Fremdbewertungen einhergeht. So kann eine höhere Bildung zu einem größeren Selbstwertgefühl und größerer Anerkennung seitens anderer beitragen. Gleichzeitig wirkt sie sich oft auch auf Lebensstile, auf Einstellungen und Wertorientierungen sowie auf die Wahl von Partnern und Freunden aus. Für die Position von Personen im Gefüge vertikaler sozialer Ungleichheiten ist jedoch nicht nur entscheidend, über welch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die Individuen verfügen, sondern vor allem auch, was sie damit anfangen können. Es reicht nicht aus, lediglich über eine gute Ausbildung zu verfügen. Wer mehr weiß und kann, mag durchaus einen sicheren Arbeitsplatz haben, ein hohes Einkommen erzielen und besseren Arbeitsbedingungen ausgesetzt sein. Dies ist jedoch nicht zwangsläufig der Fall. Und auch wenn Bildung per se zu einem höheren Sozialprestige beiträgt, so ist es doch nicht zuletzt auch die berufliche Position, die zu einer größeren oder größeren Anerkennung durch andere führt. Im übrigen dürfte auch die Eigenbewertung des erreichten Bildungsgrades von der tatsächlich erreichten beruflichen Position abhängen.

Insofern ist die Frage, inwiefern sich erworben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tatsächlich in entsprechenden Arbeitsplätzen und damit auch in entsprechenden Gratifikationen niederschlagen, keineswegs nur von akademischem Wert. Dabei ist die Anwendbarkeit der beruf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nicht nur für soziale Ungleichheiten zwischen Individuen von Bedeutung. Es ist eine Binsenweisheit, daß in einem rohstoffarmen Land wi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beruflichen Qualifikationen der erwerbstätigen Bevölkerung um so wichtiger sind. Um als Hochtechnologieland auf globalisierten Märkten bestehen zu können, bedarf es hochqualifizierter Arbeitskräfte, die innovative marktfähige Produkte auf den Weg bringen. Vor allem bedarf es aber auch gut ausgebildeter Fachkräfte, die sich im Produktionsprozeß schnell und flexibel auf diese neuen Produkte und Produktionsweisen einstellen können. Immerhin dreht sich der Wettbewerb nicht nur um die besten Produkte, sondern auch um die effizienteste Art ihrer Herstellung. Ein hoher Ausbildungsstand ist für die Betriebe im besonderen und die Volkswirtschaft im allgemeinen jedoch erst dann von größtmöglichem Nutzen, wenn die Qualifikationen auch direkt zur Anwendung kommen. Ist dies nicht der Fall, lohnen sich die von den Individuen, den Betrieben und vom Staat getätigten Ausbildungsinvestitionen für diese lediglich in eingeschränktem Maße.

In diesem Beitrag soll somit den Ausmaßen, Auswirkungen und Ursachen einer Übereinstimmung bzw. einer Nichtübereinstimmung zwischen Qualifikation und Arbeitsplatzanforderungen nachgegangen werden. Im Zentrum der Betrachtung stehen hierbei Ostdeutsche und Westdeutsche. Es ist jedoch sinnvoll, sich nicht nur auf diese Personen bzw. Regionen zu beschränken. Dabei wird hier doppelt komparativ verfahren: Zum einen wird zwischen Personen unterschieden, nämlich – neben Frauen und Männern – insbesondere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aber auch zwischen Deutschen und Ausländern (Abschnitt III). Zum anderen wird aber auch zwischen Ausbildungs- und Wirtschaftssystemen differenziert, wenn es um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der ‚alt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ht (Abschnitt IV). Schließlich wird in Abschnitt V auch anhand von Längsschnittanalysen den Entwicklungen im Zuge des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es nachgegangen. Zunächst ist jedoch zu klären, wie eine Ausbildungs(in)adäquanz festgestellt werden kann.

*Ich bedanke mich bei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für die Förderung dieses Projekts.*

## II. Was ist Ausbildungsadäquanz?

Auf den ersten Blick mag eine Nichtübereinstimmung zwischen Ausbildung und Arbeitsplatz recht einfach zu bestimmen sein. Der berühmte Taxifahrende Hochschulabsolvent kann seine an der Universität erworbenen Kenntnisse ganz eindeutig kaum anwenden und dürfte damit als Paradebeispiel fungieren<sup>1</sup>. Schwieriger wird es jedoch, wenn eine weniger große Diskrepanz zwischen Ausbildung und Arbeitsplatz existiert. Im Endeffekt könnte man beinahe alle Personen, die eine qualifizierte Tätigkeit ausüben, als überqualifiziert einstufen, d. h., sie verfügen über mehr Qualifikationen, als ihr Arbeitsplatz erfordert. Im seltensten Fall wird wirklich jede berufliche Kenntnis oder Fähigkeit direkt auf dem Arbeitsplatz eingesetzt werden. Dazu kommen noch Probleme bei der Bestimmung sowohl von Qualifikation als auch vo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Sollten die tatsäch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oder vielmehr die zertifizierten Qualifikationen gewertet werden? Soll eine Person dann als adäquat beschäftigt gelten, wenn sie ihre Qualifikationen normalerweise auf dem Arbeitsplatz einsetzen kann, oder geht es vielmehr um die (formalen) Anforderungen, um die Stelle zu bekommen<sup>2</sup>?

Darüber hinaus kann eine (Nicht-) Übereinstimmung aufgrund des Qualifikationsniveaus bzw. des Qualifikationstyps oder auch von beidem ermittelt werden. Eine Ausbildungsadäquanz hinsichtlich des Qualifikationsniveaus kann beispielsweise für Hochschulabsolventen festgestellt werden, die einer Tätigkeit nachgehen, für die lediglich eine Berufsausbildung vonnöten ist. Es ist jedoch ein Unterschied, ob dieser Hochschulabsolvent immerhin noch einen Teil seiner Kenntnisse und Fähigkeiten anwenden kann oder nicht. Hier spielt

1 Dies soll jedoch nicht heißen, daß es tatsächlich viele taxifahrende Hochschulabsolventen gibt: So fanden sich bei einer Absolventenbefragung der Diplom-Jahrgänge 1987–1992 des Otto-Suhr-Instituts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Fachbereich Politische Wissenschaft) unter den 455 Personen, die nähere Angaben zu ihrer derzeitigen Tätigkeit machten, lediglich vier TaxifahrerInnen (Tim Rössle, Berufseinmündung und Berufsverbleib Berliner PolitologInnen, Frankfurt am Main 1995). Natürlich ist nicht auszuschließen, daß bei einer solchen Absolventenbefragung die weniger erfolgreichen Personen tendenziell untererfaßt sind.

2 Im folgenden werden die tatsäch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präferiert, wobei jedoch gegebenenfalls zusätzlich dazu auch die Übereinstimmungsquoten aufgrund der zertifizierten Qualifikationen ermittelt werden. Die beim Sozio-ökonomischen Panel gestellte Frage nach den Qualifikationsanforderungen am Arbeitsplatz bezieht sich prinzipiell auf die ausgeübte Tätigkeit.

dann die Übereinstimmung hinsichtlich des Qualifikationstyps eine große Rolle.

Im folgenden wird daher zwischen sechs Übereinstimmungsgruppen unterschieden, die sich aus einer Kombination von Qualifikationsniveau und -typ ergeben:

1. *Keine besondere Ausbildung:* Diese Personen verfügen weder über eine Berufs- oder Hochschulausbildung, noch wird auf ihrem Arbeitsplatz eine solche Ausbildung vorausgesetzt.
2. *Ausbildung:* Auch bei diesen Arbeitnehmern stimmen Qualifikation und Qualifikationsanforderungen überein. Hier handelt es sich jedoch um Personen, die über eine Berufsausbildung oder einen Hochschulabschluß verfügen und auch auf einem Arbeitsplatz tätig sind, für den eine solche Ausbildung notwendig ist.
3. *Anderer Beruf:* Wer zu dieser Kategorie gehört, ist ebenfalls qualifiziert und arbeitet auch auf einem Arbeitsplatz, der eine entsprechende Ausbildung erfordert. Vom Qualifikationsniveau her entspricht die Ausbildung den Anforderungen. Das heißt, Person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Hochschulabschluß) arbeiten auch auf einem Arbeitsplatz, der in der Regel eine Berufsausbildung (Hochschulabschluß) erfordert. Allerdings differieren Individuum und Arbeitsplatz hinsichtlich des Qualifikationstyps. Das heißt, diese Arbeitskräfte geben an, daß ihre ausgeübte Tätigkeit nicht mit ihrem erlernten Beruf übereinstimmt.
4. *Überqualifiziert: erlernter Beruf:* Hierzu gehören Arbeitnehmer, die zwar für ihren Arbeitsplatz überqualifiziert sind. Sie können jedoch einen größeren Teil ihrer Qualifikationen anwenden, da ihre berufliche Tätigkeit mit ihrem Qualifikationstyp übereinstimmt. Beispiel: ein Elektroingenieur arbeitet als Elektriker.
5. *Überqualifiziert: anderer Beruf:* Hierunter fallen die vom Ausbildungsniveau her überqualifizierten Personen, die auf Arbeitsplätzen beschäftigt sind, die mit ihrer Ausbildung kaum etwas zu tun haben. Beispiel: ein Hochschulabsolvent, der Taxi fährt.
6. *Unterqualifiziert:* Diese Arbeitskräfte sind für ihre Tätigkeit unterqualifiziert, d. h., sie sind auf Arbeitsplätzen tätig, die ein höheres Ausbildungsniveau als das eigene erfordern. Dies trifft beispielsweise auf Person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zu, die seit vielen Jahren auf einer Stelle arbeiten, für die zum Zeitpunkt der



Arbeitsplatzaufnahme eine Berufsausbildung, mittlerweile jedoch ein Universitätsabschluß erforderlich ist. Die meisten Unterqualifizierten dürften dieser Gruppe angehören, wohingegen eine Unterqualifikation mit gleichzeitiger Nichtübereinstimmung beim Qualifikationstyp seltener auftreten müßte.

### III. Ostdeutsche und Westdeutsche

In der ersten Graphik werden die Arbeitnehmeranteile in diesen sechs Übereinstimmungsgruppen dargestellt. Dabei wird zwischen westdeutschen, ostdeutschen und ausländischen Frauen und Männern unterschieden<sup>3</sup>. Ein Beispiel: etwa sieben Prozent der westdeutschen Beschäftigten verfügen über keine besondere Berufsausbildung und arbeiten auch auf entsprechenden Arbeitsplätzen.

Die Graphik 1 belegt zunächst, daß sowohl bei Ostdeutschen als auch bei Westdeutschen die jeweils größte Gruppe aus den qualifizierten Arbeitnehmern besteht, die adäquat beschäftigt sind. Diese Personen haben eine Berufsausbildung oder einen Hochschulabschluß, und sie arbeiten auch auf Stellen, die eine Berufsausbildung oder einen Hochschulabschluß erfordern. Es wird aber auch deutlich, daß ein nicht unerheblicher Anteil der Beschäftigten für ihren Arbeitsplatz in der Tat überqualifiziert ist, d. h., ihre Qualifikation übertrifft die Arbeitsplatzanforderungen. Wenn man diese Arbeitnehmer weiterhin nach dem Grad ihrer Überqualifikation differenziert, stellt sich heraus, daß die meisten Überqualifizierten ihre beruf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kaum anwenden können.

Des Weiteren zeigt sich, daß qualifizierte ostdeutsche Männer im Vergleich zu Westdeutschen einem größeren Risiko ausgesetzt sind, nicht gemäß ihrer Ausbildung beschäftigt zu werden<sup>4</sup>.

3 Die Datenbasis ist hier das Sozio-oekonomische Panel (Projektgruppe Sozio-ökonomisches Panel, Zehn Jahre Sozio-oekonomisches Panel (SOEP), in: Vierteljahreshefte zur Wirtschaftsforschung, 62 (1993) 1/2, S. 27–42. Eine ausführlichere Dokumentation der Operationalisierungen findet sich in Marc Szydlik, Zur Übereinstimmung von Ausbildung und Arbeitsplatzanforder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9 (1996) 2, S. 295–306.

4 Hierbei werden natürlich nur die qualifizierten Arbeitnehmer einbezogen. D. h., es werden die adäquat beschäftigten Qualifizierten in Bezug gesetzt zu den Überqualifizierten. In Graphik 1 sind jedoch (in der ersten und letzten Übereinstimmungsgruppe) auch die Personen mit keiner besonderen Ausbildung enthalten (s. o.).

Dieses Ergebnis deutet auf eine Diskrepanz zwischen einer DDR-Ausbildung und den neuen Arbeitsplatzanforderungen im Zuge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hin. Man kann prinzipiell argumentieren, daß Überqualifikationen besonders dann auftreten, wenn neue Technologien oder neue Produktions- und Organisationsweisen eingeführt werden bzw. wenn Berufe aussterben oder in andere, z. B. Billiglohnländer verlagert werden<sup>5</sup>. Wenn man sich auf die tatsäch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bezieht, sind knapp 27 Prozent der westdeutschen und 33 Prozent der ostdeutschen Männer mit einer Berufsausbildung oder einem Hochschulstudium für ihren Arbeitsplatz überqualifiziert. Wenn man lediglich die zertifizierten Ausbildungsabschlüsse berücksichtigt (s. o.), liegt der Anteil der westdeutschen überqualifizierten Männer bei etwa 23 Prozent, wobei die entsprechende Quote für Ostdeutsche weiterhin über 30 Prozent beträ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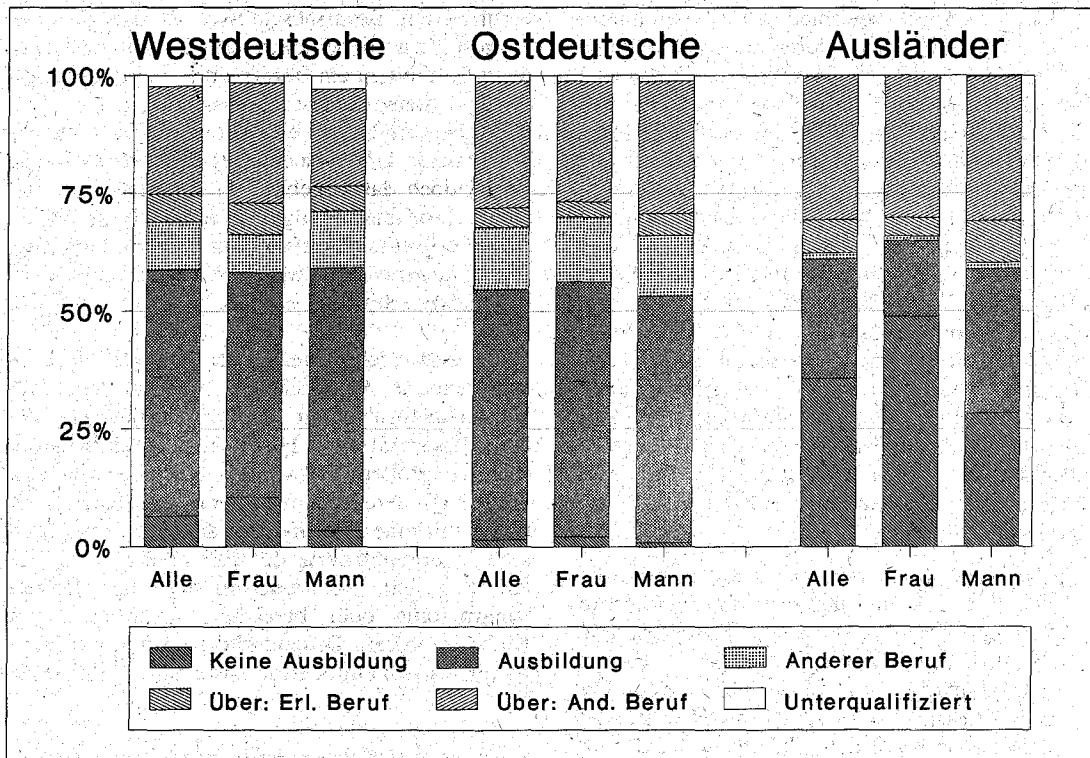
Man könnte argumentieren, daß selbst diese Differenzen in Anbetracht der massiven Veränderungen in Ostdeutschland relativ gering sind. Ergebnisse anderer Studien belegen, daß relativ viele ostdeutsche Erwerbspersonen ihre frühere Position (bzw. den alten Beruf) halten können<sup>6</sup>. Es ist zudem mit zu bedenken, daß es sich bei den hier einbezogenen Ostdeutschen in gewisser Weise um Arbeitsmarktgewinner handelt, die nicht von Arbeitslosigkeit oder einer mehr oder weniger freiwilligen (Früh-)Ausgliederung aus dem Arbeitsmarkt betroffen sind bzw. waren. Außerdem legen weitere Untersuchungen nahe, daß e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ine größere Übereinstimmung zwischen Ausbildung und Arbeitsplatz gegeben hat als in der 'alten' Bundesrepublik (s. u.).

Westdeutsche qualifizierte Frauen sind, wie erwartet, einem größeren Risiko ausgesetzt, nicht adäquat beschäftigt zu werden. Dies dürfte unter anderem auf Faktoren wie familienbedingte Erwerbsunterbrechungen bei gleichzeitiger Dequalifizierung (aufgrund nicht genutzter Kenntnisse),

5 Dies dürfte dann nicht zuletzt auch ältere Arbeitskräfte treffen, deren Ausbildung vergleichsweise lange zurückliegt. Eine Differenzierung der in Graphik 1 vorgestellten Ergebnisse nach Altersgruppen belegt jedenfalls, daß ältere westdeutsche Arbeitnehmer mit einer Berufsausbildung deutlich häufiger inadäquat beschäftigt sind als jüngere (vgl. auch Abschnitt IV).

6 Vgl. Martin Diewald/Heike Solga, Ordnung im Umbruch? Strukturwandel, berufliche Mobilität und Stabilität im Transformationsprozeß, in: Lars Clausen (Hrsg.), Gesellschaften im Umbruch – Verhandlungen des 27. Kongresses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ologie in Halle an der Saale 1995, Frankfurt am Main – New York 1996.

**Graphik 1: Ausbildungsadäquanz von Westdeutschen, Ostdeutschen und Ausländern**



Datenbasis: Sozio-ökonomisches Panel (1993). Hochgerechnete Ergebnisse, eigene Berechnungen.

der Verlagerung von Arbeitsplätzen in Billiglohnländer (z.B. Schneiderarbeiten), der beruflichen Segregation der Geschlechter sowie auf Arbeitsmarktdiskriminierungen zurückzuführen sein. Eine Erklärung für die umgekehrte Relation bei Ostdeutschen könnte auch darin liegen, daß ostdeutsche Frauen, die einen Großteil ihrer Kenntnisse nicht anwenden können, ein noch höheres Arbeitslosigkeitsrisiko aufweisen als Männer – und somit bei den Analysen nicht einbezogen sind. Zudem arbeiten ostdeutsche Frauen häufiger in Bereichen, die im Zuge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besondere Chancen bieten (z.B. Banken und Versicherungen)<sup>7</sup>.

7 Siehe z.B. Karl Ulrich Mayer/Martin Diewald/Heike Solga, Processe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on the Labor Market in the Transformation of East Germany. European Science Foundation Conference 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Theoretical and Policy Perspectives on Poverty and Inequality', Blarney (Irland), 26.–31. März 1996 (Manuskript). M. Diewald/H. Solga (Anm. 6, S. 269) kommen zu dem Ergebnis, daß ostdeutsche Frauen, die sowohl 1989 als auch 1993 erwerbstätig waren, im Vergleich mit ostdeutschen Männern in diesem Zeitraum deutlich seltener in ein anderes Tätigkeitsfeld wechselten.

Ob man seine erworben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auf dem Arbeitsplatz anwenden kann, hängt nicht zuletzt von der Art der beruflichen Qualifikationen ab. Vergleiche von Person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mit einem Fachhochschulabschluß und einem Universitätsabschluß legen jedenfalls folgende Schlußfolgerung nahe: Je besser man ausgebildet ist, um so größer ist die Wahrscheinlichkeit, angemessen beschäftigt zu sein<sup>8</sup>.

Es ist allerdings nicht ganz einfach, sich auf genaue Anteile an überqualifizierten Beschäftigten je nach Ausbildungsniveau festzulegen (auf die Schwierigkeiten bei der Feststellung der Ausbil-

8 Siehe z.B. auch Hannelore Plicht/Karen Schober/Franziska Schreyer, Zur Ausbildungsadäquanz der Beschäftigung von Hochschulabsolventinnen und -absolventen – Versuch einer Quantifizierung anhand der Mikrozensus 1985 bis 1991,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7 (1994) 3, S. 177–204. Dies muß jedoch nicht bedeuten, daß Doppelqualifikationen von entsprechend größerem Nutzen sind (vgl. Felix Büchel, Der hohe Anteil an unterwertig Beschäftigten bei jüngeren Akademikern: Karrierezeitpunkt- oder Strukturwandel-Effekt?,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9 (1996) 2, S. 279–294).

dungsadäquanz wurde bereits hingewiesen). Wenn man die Ergebnisse verschiedener Studien miteinander vergleicht, so divergieren diese vor allem bei den Anteilen von Person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In bezug auf Hochschulabsolventen ist man sich jedoch relativ einig. Der entsprechende Anteil bei Westdeutschen dürfte demnach im Bereich 20 Prozent minus x liegen. So ermittelt das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ine Akademiker-Überqualifikationsquote von einem Fünftel, während Hannelore Plicht u. a. auf der Grundlage der Mikrozensen von 1985 bis 1991 für Personen mit einem Fachhochschulabschluß eine entsprechende Quote zwischen 10 und 20 Prozent und für Universitätsabsolventen einen Anteil zwischen 8 und 16 Prozent feststellen. Felix Büchel kommt für Westdeutsche mit einem Fachhochschul- oder Universitätsabschluß auf rund 15 Prozent<sup>9</sup>. Die hier ermittelten 17 Prozent entsprechen somit in etwa diesen anderen Ergebnissen.

In bezug auf Arbeitnehmer mit einer Berufsausbildung ergibt sich ein deutlich uneinheitlicheres Bild. James C. Witte und Arne L. Kalleberg kommen zu dem Ergebnis, daß sogar etwa 50 Prozent der Westdeutsch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inadäquat beschäftigt sind, während Christoph F. Büchtemann u. a. auf der Basis von Längsschnittanalysen feststellen, daß rund 30 Prozent der Arbeitskräfte fünf Jahre nach Verlassen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für ihre Tätigkeit überqualifiziert sind. Manfred Tessaring berichtet, daß 28 Prozent der Fachkräfte mit betrieblicher oder berufsfachschulischer Ausbildung auf Nichtfacharbeiterpositionen, als un- oder angeleitete Hilfskräfte, tätig sind. Hannelore Plicht u. a. kommen auf einen Anteil von 25 Prozent überqualifizierte Erwerbstätige mit einer abgeschlossenen Lehre bzw. Berufsfachschule, und Felix Büchel ermittelt rund 20 Prozent überqualifizierte Westdeutsche mit einer abgeschlossenen Berufsausbildung<sup>10</sup>. Die

9 Vgl. Informationsdienst des Instituts der deutschen Wirtschaft, Akademiker-Beschäftigung – Ein Fünftel unter Niveau, 20 (1994) 30, S. 4–5. H. Plicht u. a. (Anm. 8); Felix Büchel, Unterwertige Beschäftigung in Ostdeutschland – Erste Informationen zu Größenordnungen und Entwicklungstendenzen, in: Doris Beer/Christian Brinkmann/Axel Deeke/Sabine Schenk (Hrsg.), Empirische Arbeitsmarktforschung zur Transformation in Ostdeutschland, SAMF-Arbeitspapier, (1995) 4, S. 187–195 (SAMF = Arbeitskreis Sozialwissenschaftliche Arbeitsmarktforschung). Beim Vergleich mit den Ergebnissen von H. Plicht u. a. ist auch zu bedenken, daß sich die vorliegende Studie auf die abhängig Beschäftigten konzentriert und unter den Hochschulabsolventen sowohl Personen mit einem Universitäts- als auch einem Fachhochschulabschluß gefaßt sind.

10 Vgl. James C. Witte/Arne L. Kalleberg, Matching Training and Jobs: The Fit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in the German Labor Market, in: Euro-

pean Sociological Review, 11 (1995) 3, S. 293–317; Christoph F. Büchtemann/Jürgen Schupp/Dana J. Soloff, Übergänge von der Schule in den Beruf – Deutschland und USA im Vergleich,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6 (1993) 4, S. 507–520 (insbesondere S. 514, s. dort in Tabelle 2b die Personenanteile unter A und B); Manfred Tessaring, Das duale System der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Attraktivität und Beschäftigungsperspektiven – Ein Beitrag zur gegenwärtigen Diskussion,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6 (1993) 2, S. 131–161 (hier S. 147); H. Plicht u. a. (Anm. 8); F. Büchel (Anm. 9).

Daß Ostdeutsche eher überqualifiziert sind als Westdeutsche, läßt sich vor allem auch an den Hochschulabsolventen ablesen. Ostdeutsche Arbeitnehmer mit einer Hochschulausbildung haben offenbar größere Schwierigkeiten, eine adäquate Stelle zu finden. Zudem zeigt sich bei den Beschäftigt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daß westdeutsche Überqualifizierte deutlich häufiger auf Stellen tätig sind, die immerhin noch eine längere Einarbeitung oder besondere Lehrgänge bzw. Kurse erfordern. Ostdeutsche sind hingegen relativ oft auf den einfachsten Arbeitsplätzen beschäftigt.

Auch wenn sich dieser Beitrag auf West- und Ostdeutsche konzentriert, so soll hier 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lebenden Ausländern nicht völlig außer acht gelassen werden<sup>11</sup>. Graphik 1 führt die Übereinstimmungsanteile der abhängig beschäftigten Türken, Jugoslawen, Italiener, Griechen und Spanier auf. Es zeigt sich einerseits, daß Ausländer deutlich geringere Qualifikationen aufweisen als Deutsche. Andererseits sind die qualifizierten Ausländer einem sehr viel höheren, nämlich einem etwa doppelt so hohen Risiko ausgesetzt, inadäquat beschäftigt zu sein: Etwa 60 Prozent der qualifizierten Ausländer sind für ihre Tätigkeit überqualifiziert. Daß Ausländerinnen besonders häufig überqualifiziert sind, mag nicht zuletzt an

pean Sociological Review, 11 (1995) 3, S. 293–317; Christoph F. Büchtemann/Jürgen Schupp/Dana J. Soloff, Übergänge von der Schule in den Beruf – Deutschland und USA im Vergleich,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6 (1993) 4, S. 507–520 (insbesondere S. 514, s. dort in Tabelle 2b die Personenanteile unter A und B); Manfred Tessaring, Das duale System der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Attraktivität und Beschäftigungsperspektiven – Ein Beitrag zur gegenwärtigen Diskussion, in: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6 (1993) 2, S. 131–161 (hier S. 147); H. Plicht u. a. (Anm. 8); F. Büchel (Anm. 9).

11 Vgl. Marc Szydlík, Ethnische Ungleichheit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8 (1996) 4, S. 658–676.

ihrem hohen Beschäftigungsanteil im sekundären Arbeitsmarktsegment liegen<sup>12</sup>.

Besonders interessant ist es, die erste von der zweiten Immigrantengeneration zu unterscheiden. Hier stellt sich insbesondere die Frage, inwiefern sich ethnische Ungleichheiten über die Generationen verringern. Weitere empirische Analysen kommen in der Tat zu dem Ergebnis, daß die Mitglieder der zweiten Immigrantengeneration sowohl besser qualifiziert sind als auch einen geringeren Anteil an inadäquater Beschäftigung aufweisen. Während nur jeder dritte Qualifizierte der ersten Generation einer angemessenen Tätigkeit nachgeht, so trifft dies bei der zweiten Generation bereits auf drei von fünf Ausgebildeten zu. Die Unterschiede zwischen der ersten und der zweiten Generation sind dabei für Frauen noch größer als für Männer – dies liegt an der besonders ungünstigen Situation der ersten Ausländerinnengeneration. Dennoch zieht die zweite Ausländergeneration mit den deutschen Arbeitskräften längst nicht gleich, und zwar weder im Schul- und Berufsausbildungssystem noch auf dem Arbeitsmarkt. Der Anteil der qualifizierten Ausländer der zweiten Generation, die einer angemessenen Tätigkeit nachgehen, liegt immer noch deutlich unter dem der Deutschen. Zudem sprechen eine Reihe von Entwicklungen für eine Verschlechterung der Arbeitsmarktchancen von Immigran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 B. aufgrund der Wiedervereinigung, einer Erweiterung der Europäischen Union um osteuropäische Länder sowie der fortschreitenden Verschlankung der bundesrepublikanischen Produktion und Dienstleistungen).

Bei der Untersuchung der Ausbildungsadäquanz aus dem Blickwinkel sozialer Ungleichheiten stellt sich insbesondere die Frage nach den Folgen einer Überqualifikation für die Individuen. Was bedeutet es für arbeitsmarktgenerierte soziale Ungleichheiten, wenn man nicht gemäß seiner erworben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beschäftigt ist? Zur Beantwortung dieser Frage wird hier zunächst auf die Arbeitseinkommen eingegangen. In Abschnitt V geht es dann auch um die Betroffenheit von Arbeitslosigkeit.

In der folgenden Tabelle wird zwischen drei Qualifikations- und den oben beschriebenen sechs Übereinstimmungsgruppen sowie zwischen west- und ostdeutschen Arbeitnehmern unterschieden.

12 Vgl. ders., Die Segmentierung des Arbeitsmarkte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Eine empirische Analyse mit Daten des Sozio-ökonomischen Panels, 1984–1988, Berlin 1990.

Für diese Gruppen werden die Bruttostunden-einkommensmediane ermittelt. Es zeigt sich beispielsweise, daß der mittlere westdeutsche Arbeitnehmer, der weder über eine Berufsausbildung noch über einen Hochschulabschluß verfügt und gleichzeitig auf einem Arbeitsplatz beschäftigt ist, der eine solche Qualifikation auch nicht voraussetzt, 15,72 DM brutto pro Stunde verdient<sup>13</sup>.

Die Tabelle belegt vor allem, daß die Arbeitseinkommen weder alleine von der Ausbildung noch ausschließlich vom Arbeitsplatz abhängen. Die Verdiensthöhen ergeben sich vielmehr aus einer Kombination zwischen Qualifikation und Tätigkeit. Überqualifizierte erhalten ein wesentlich geringeres Entgelt als jemand mit einer ähnlichen Ausbildung, der jedoch adäquat beschäftigt ist. So erreicht beispielsweise der mittlere westdeutsche Arbeitnehmer mit einer Berufsausbildung, der auf einem entsprechenden Arbeitsplatz tätig ist, einen Bruttostundenverdienst von 21,04 DM. In der Gruppe der Überqualifizierten mit relativ großer Ausbildungsredundanz erhält der mittlere Beschäftigte mit einer Berufsausbildung jedoch lediglich 18,74 DM (bei Akademikern ist diese Diskrepanz noch viel größer). Daß die Einkommen nicht nur von der Ausbildung abhängen, zeigt sich auch sehr deutlich beim Vergleich der adäquat Beschäftigten mit den Unterqualifizierten. Wenn man als Westdeutscher mit einer Berufsausbildung einer Tätigkeit nachgeht, für die in der Regel jedoch ein abgeschlossenes Hochschulstudium vonnöten ist, steigt der Verdienst deutlich auf 30,66 DM. Für Ostdeutsche ergeben sich ähnliche Relationen.

Umgekehrt ist für die Arbeitseinkommen jedoch nicht nur der Arbeitsplatz das Maß aller Dinge. Je nach Ausbildung erreichen die Beschäftigten auf Stellen mit ähnlichen Arbeitsplatzanforderungen unterschiedlich hohe Entgelte. So verdient zum Beispiel der mittlere überqualifizierte Westdeutsche mit einer Berufsausbildung wesentlich mehr als die mittlere adäquat eingesetzte Person, die über keine besondere Ausbildung verfügt; bei Hochschulschulabsolventen ist die entsprechende Differenz sogar noch größer. Dies spricht nicht zuletzt für das Arbeitsplatzwettbewerbsmodell

13 Im Gegensatz zu den Monatsverdiensten werden dadurch sowohl mögliche Erwerbsumfangs- als auch Selektionseffekte (beispielsweise durch eine Konzentration auf Vollerwerbstätige) vermieden. Anhand der Bruttoentgelte werden die Einkommensdifferenzen erfaßt, die tatsächlich auf Arbeitsstrukturen zurückgehen und nicht etwa auf Steuer- und Abgabeneffekten beruhen.

**Tabelle: Mittlere Stundeneinkommen westdeutscher und ostdeutscher Arbeitnehmer 1993 (in DM)**

	Erworbene Qualifikation		
	Keine bes. Ausb.	Beruf	Hochschule
<i>Westdeutsche</i>			
Keine besondere Ausbildung	15,72	-	-
Ausbildung	-	21,04	36,37
Anderer Beruf	-	23,00	35,87*
Überqualifiziert: Erlerner Beruf	-	19,23	30,66
Überqualifiziert: Anderer Beruf	-	18,74	25,12*
Unterqualifiziert	#	30,66	-
<i>Ostdeutsche</i>			
Keine besondere Ausbildung	11,50*	-	-
Ausbildung	-	13,88	20,70
Anderer Beruf	-	13,03	19,42*
Überqualifiziert: Erlerner Beruf	-	11,76	17,25*
Überqualifiziert: Anderer Beruf	-	11,56	14,37
Unterqualifiziert	#	19,07*	-

Datenbasis: Sozio-ökonomisches Panel (1993). Hochgerechnete Ergebnisse, eigene Berechnungen. '-' = Kombination nicht möglich. '# = Fallzahl < 10. '\* = Fallzahl < 30.

von Lester C. Thurow<sup>14</sup>. Dabei werden die potentiellen Arbeitskräfte unter anderem hinsichtlich der Kosten für ihre innerbetriebliche Einarbeitung in Konkurrenz zueinander gesehen. Wer sich aufgrund dieses Kriteriums weiter vorne in der Arbeitskräfteschlange befindet, wird zuerst auf den zur Verfügung stehenden Arbeitsplatz eingestellt.

Daraus ergibt sich einerseits, daß es tatsächlich Beschäftigte geben kann, die für ihren Arbeitsplatz überqualifiziert sind. Andererseits kann vermutet werden, daß diese Überqualifizierten, da sie nur einen Teil ihrer erworben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direkt einsetzen können, weniger verdienen, als wenn sie auf einem adäquaten, also anspruchsvolleren Arbeitsplatz tätig wären. Die Tabelle zeigt jedenfalls, daß die über die erforderliche Qualifikation hinausgehenden Ausbildungsjahre ebenfalls „Renditen“ bringen – allerdings nicht in demselben Maße wie bei einer adäquaten Beschäftigung (z. B. 15,72 vs. 18,74 vs. 21,04). Gleichzeitig wird belegt, daß eine über die Arbeitsplatzanforderungen hinausgehende Ausbildung ein höheres Entgelt mit sich bringt, wenn die ausgeübte Tätigkeit immerhin noch mit dem Qualifikationstyp übereinstimmt. Je mehr Kenntnisse angewendet werden können, um so höher ist das Arbeitseinkommen<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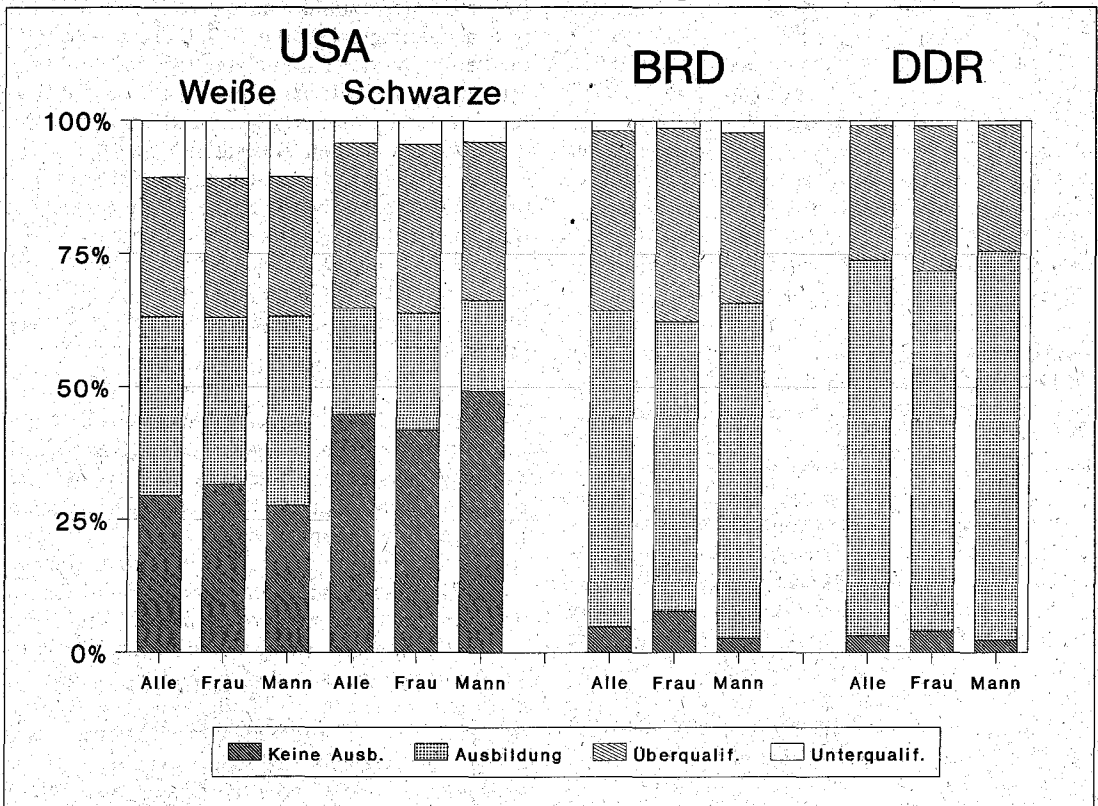
14 Vgl. Lester C. Thurow: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1975.

15 Die in der Tabelle aufgeführten Ergebnisse werden durch entsprechende Analysen mit komplexen statistischen Verfahren insgesamt bestätigt.

#### IV. Die Bundesrepublik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Um Besonderheiten herauszuarbeiten, ist es sinnvoll, Vergleiche anzustellen. Im folgenden soll also dargestellt werden, inwiefern sich die ‚alte‘ und die ‚neu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und die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hinsichtlich des Zusammenbringens von Individuen und Arbeitsplätzen unterscheiden. Einerseits kann damit die Qualität und Effizienz der jeweiligen Berufsausbildungssysteme besser eingeschätzt werden. Andererseits sind bei der Untersuchung von arbeitsmarktvermittelten sozialen Ungleichheiten Vergleiche zwischen Wirtschaftssystemen besonders aufschlußreich. Es ist von besonderem Interesse, inwiefern verschiedene Wirtschaftsverfassungen ähnliche bzw. unterschiedliche Allokationsmechanismen aufweisen. Dabei liegen die USA und die DDR hinsichtlich ihrer Wirtschaftsverfassungen sicherlich am weitesten auseinander, wobei die BRD eine mittlere Position einnimmt. Die USA liegen mit ihrem deutlich ‚deregulierten‘ Arbeitsmarkt näher an einem marktwirtschaftlichen Ideal als die hochinstitutionalisiert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mgekehrt kann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auch im Vergleich mit anderen ehemaligen Ostblockländern als relativ nahe an einem planwirtschaftlichen Ideal eingestuft werden. So ist beispielsweise auch das sozialistische Ungarn den planwirtschaftlichen Systemen zuzurechnen.

**Graphik 2: Ausbildungsadäquanz von Arbeitnehmern in den USA, der ‚alt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tenbasis: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85); Sozio-ökonomisches Panel (1990). Hochgerechnete Ergebnisse, eigene Berechnungen.

Hier herrschten jedoch seit Ende der sechziger/Anfang der siebziger Jahre gerade auf betrieblicher Ebene mehr Freiheiten, als dies in der DDR der Fall war<sup>16</sup>.

In Graphik 2 werden, ähnlich wie in der ersten Graphik, die Übereinstimmungsanteile der abhängig Beschäftigten aufgeführt. Dabei wird zwischen Weißen und Schwarzen in den USA, Deutschen in der ‚alt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utsch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terschieden. Allerdings kann hier aufgrund des Fehlens entsprechender Informationen bei der US-amerikanischen Befragung (PSID) ‚lediglich‘ eine Ausbildungs(in)adäquanz hinsichtlich des Qualifikationsniveaus festgestellt werden<sup>17</sup>. Es wird somit zwischen Personen unterschieden, die

- keine besondere Ausbildung aufweisen und auf einem entsprechenden Arbeitsplatz tätig sind;
- über besondere beruflich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verfügen und ebenfalls adäquat beschäftigt sind;
- ein höheres Ausbildungsniveau aufweisen als die Stelle erfordert und
- für ihren Arbeitsplatz unterqualifiziert sind<sup>18</sup>.

<sup>18</sup> Dabei werden die Arbeitskräfte und die Arbeitsplätze jeweils drei Qualifikations(anforderungs)niveaus zugeordnet: a) Keine weitere Ausbildung; b) Berufsausbildung (DDR und BRD) bzw. Highschool-Abschluß plus Vocational Training oder Collegebesuch ohne Abschluß oder Associate Degree (USA) und c) Hochschulabschluß (DDR und BRD) bzw. Collegeabschluß (USA). Aus der Kombination dieser drei Ausbildungs- und Arbeitsplatzkategorien ergeben sich dann die vier Übereinstimmungsgruppen (so wird z. B. jemand als überqualifiziert erachtet, wenn sie/er einen Collegeabschluß hat, jedoch einer Tätigkeit nachgeht, für die ‚nur‘ ein Collegebesuch ohne Abschluß vonnöten ist).

<sup>16</sup> Vgl. Rainer Deppe/Dietrich Hoß, Arbeitspolitik im Staatssozialismus. Zwei Varianten: DDR und Ungarn, Frankfurt am Main – New York 1989.

<sup>17</sup> Vgl. Martha S. Hill,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A User's Guide, Newbury Park u. a. 1991.

Zunächst zeigt sich, daß in den Vereinigten Staaten deutlich weniger Arbeitnehmer über eine höhere Ausbildung verfügen als in der DDR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6 Prozent der US-amerikanischen Arbeitnehmer weisen höchstens einen Highschool-Abschluß (also eine zwölfjährige Schulausbildung) auf<sup>19</sup>.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aren hingegen nur dreieinhalb Prozent der Arbeitskräfte ohne Berufsausbildung oder Universitätsabschluß. Bei Westdeutschen trifft dies aufgrund dieser Auswertungen für knapp fünf Prozent der Arbeitnehmer zu<sup>20</sup>.

Alle drei Länder zeichnen sich durch eine deutliche Diskrepanz zwischen den gesamten erworbenen und den gesamten erforderlichen Qualifikationen aus. Das heißt, es werden insgesamt weniger Kenntnisse verlangt als vorhanden sind. Die größte Übereinstimmung zwischen erworbenen und erforderlichen Qualifikationen existier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amit wird die These bestätigt, daß es in einer Planwirtschaft – wie der DDR – eine größere Übereinstimmung zwischen Ausbildung und Arbeitsplatz gibt. Wenn die zur Verfügung stehenden Qualifikationen zentral auf die Nachfrage abgestimmt werden, dürften sich redundante Qualifikationen aufgrund von Informationsdefiziten der Individuen bzw. aufgrund von nicht nach einem nutzenmaximierenden rationalen Kalkül entscheidenden Schülern bzw. deren Eltern in gewissen Grenzen halten.

Die geringste Übereinstimmung zwischen Ausbildung und Arbeitsmarkt existiert in den USA. Ein Grund hierfür dürfte im weniger regulierten Ausbildungssystem und den weniger formalisierten Arbeitsplatzanforderungen in den Vereinigten Staaten liegen. Besonders die Quote der formal Unterqualifizierten zeigt, daß sich die Arbeits-

platzanforderungen in den USA weniger strikt an formalen Ausbildungsabschlüssen orientieren als i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Zudem sind in den Vereinigten Staaten tayloristische Produktionsweisen mit den damit einhergehenden geringen Arbeitsplatzanforderungen weiterhin weit verbreitet. Aufgrund dieser Analysen sind 40 Prozent der qualifizierten weißen Amerikaner für ihre Tätigkeit überqualifiziert. Bei schwarzen Männern liegt diese Quote sogar bei 60 Prozent. Demgegenüber weis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und das galt auch für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eine deutlich bessere Nutzung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Qualifikationen auf (vgl. auch Graphik 1).

Weitere Analysen ergeben, daß sich die drei Länder nicht nur in den Anteilen an Überqualifizierten unterscheiden, sondern auch in der Zusammensetzung der Übereinstimmungsgruppen. Besonders interessant ist hierbei eine Differenzierung nach Altersgruppen. Für Westdeutsche mit einer Berufsausbildung zeigt sich, daß das Risiko, überqualifiziert zu sein, mit dem Alter zunimmt. In den USA ergibt sich jedoch der genau umgekehrte Zusammenhang: Hier sind es gerade die Jüngeren, die besonders häufig inadäquat beschäftigt sind. Diese Ergebnisse reflektieren nicht zuletzt Unterschiede zwischen den spezifischen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systemen in den US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m bundesrepublikanischen dualen Ausbildungssystem dürften jüngere Arbeitskräfte auch deshalb eine größere Übereinstimmung aufweisen, weil ihre beruflichen Fähigkeiten und Kenntnisse erst kürzlich erworben wurden und somit noch nicht der Entwertung aufgrund technologischer Weiterentwicklungen unterliegen. Der relativ enge Betriebsbezug der dualen Berufsausbildung dürfte sich somit gerade für Jüngere auszahlen. In den USA gibt es jedoch kein entwickeltes betriebliches Qualifikationssystem mit standardisierten Ausbildungsrichtlinien, so daß die notwendigen Fähigkeiten oftmals direkt am Arbeitsplatz erlernt werden. Dort dürften sich die Beschäftigten somit erst mit der Zeit auf einen adäquaten Arbeitsplatz hocharbeiten: ohne on-the-job-Training bedeutet eine US-amerikanische, betriebsfernere Ausbildung oftmals, daß besondere Anforderungen noch nicht erfüllt werden können. Allerdings scheint on-the-job-Training dann aber auch besser vor Dequalifizierungen im Laufe des Erwerbslebens – u. a. aufgrund einer größeren Zeitspanne seit der allgemeinen Ausbildung – zu schützen.

19 Sowohl in den USA als auch in der Bundesrepublik liegt das mittlere Alter beim Schulabschluß bei 18 Jahren. In der BRD verlassen die Hauptschüler die allgemeinbildende Schule im Ideal mit 16, die Realschüler mit 17 und die Gymnasiasten mit 19,5 Jahren. In den USA endet die einheitliche Highschool mit dem 18ten Lebensjahr, wobei diese jedoch von 15 bis 20 Prozent vorher abgebrochen wird – in der alten Bundesrepublik lag der Anteil der Schulabbrecher im Jahre 1991 bei unter sieben Prozent (vgl. z. B. Chr. F. Büchtemann u. a., Anm. 10).

20 Da auch in dieser Übersicht eher die tatsächlichen als die zertifiziert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berücksichtigt werden, ergibt sich hier ein niedrigerer Unqualifiziertenanteil als in der amtlichen Statistik (Statistisches Bundesamt [Hrsg.], Statistisches Jahrbuch 1994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esbaden 1994, S. 124 und eigene Berechnungen).

## V. Transformation in Ostdeutschland

In Abschnitt IV wurde unter anderem der Übereinstimmung von erworbenen und erforderlichen Qualifikation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nachgegangen. Als nächstes soll festgestellt werden, inwiefern sich im Zuge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Veränderungen für die Arbeitskräfte ergeben haben. Die entsprechenden Auswertungen können einerseits einen Hinweis auf die Frage geben, inwiefern sich ostdeutsche Arbeitskräfte in der Lage sehen, ihre in der DDR erworbenen Qualifikationen unter den neuen Bedingungen anzuwenden. Andererseits soll hier anhand der Betroffenheit von Arbeitslosigkeit einer weiteren Folge einer Ausbildungs(in)adäquanz nachgegangen werden.

Wenn man die jeweiligen Übereinstimmungsanteile des Jahres 1990 mit denen des Jahres 1993 vergleicht, stellt man fest, daß sich für Ostdeutsche im Gegensatz zu Westdeutschen der Anteil der Überqualifizierten vergrößert hat (vgl. auch die Graphiken 1 und 2). Auch dieses Ergebnis spricht für die Hypothese, daß technologischer bzw. arbeitsorganisationaler Wandel zu höheren Überqualifikationsquoten führt (vgl. Abschnitt III).

Anhand von Graphik 3 soll nun verfolgt werden, was aus den Personen geworden ist, die 1990 adäquat oder inadäquat beschäftigt waren. Hierfür werden drei Personengruppen unterschieden, näml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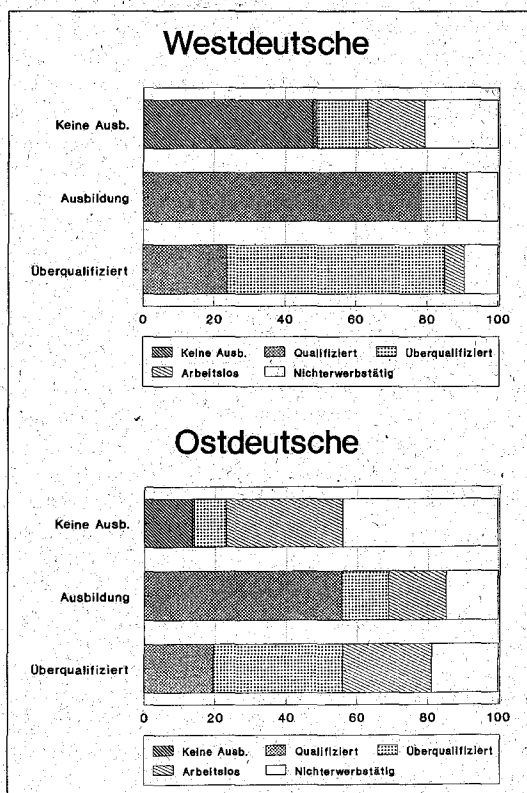
- Arbeitnehmer mit keiner besonderen Ausbildung, die 1990 auf einem entsprechenden Arbeitsplatz tätig waren;
- qualifizierte Arbeitskräfte, die ebenfalls adäquat beschäftigt waren (also auf einer Stelle arbeiteten, die besondere Qualifikationen erforderte) und
- Überqualifizierte.

Dabei wird nicht nur auf Erwerbstätige abgestellt, sondern auch auf die Beschäftigten, die drei Jahre nach dem Zusammenbruch der DDR entweder arbeitslos oder nichterwerbstätig waren.

Der erste Balken zeigt eindrucksvoll, daß die wenigen Unqualifizierten in der DDR in ihrer übergroßen Mehrheit unter den neuen Arbeitsmarktbedingungen wenig Chancen hatten. Beinahe vier Fünftel von ihnen waren 1993 nicht mehr erwerbstätig: Hier handelt es sich nicht

zuletzt um ältere Arbeitskräfte, die in den Ruhestand bzw. Vorruhestand gingen.

**Graphik 3: Die Mobilität zwischen Übereinstimmungsgruppen (1990–1993)**



Datenbasis: Sozio-ökonomisches Panel (1990 bis 1993). Hochgerechnete Ergebnisse, eigene Berechnungen.

Gleichzeitig wird deutlich, daß ostdeutsche im Vergleich zu westdeutschen Qualifizierten ein größeres Risiko aufweisen, drei Jahre nach der Einheit überqualifiziert zu sein. Es ist jedoch nicht zu übersehen, daß die große Mehrheit weiterhin (bzw. wieder) auf einem adäquaten Arbeitsplatz tätig ist.

Ein weiteres wichtiges Ergebnis von Graphik 3 ist, daß das Arbeitslosigkeitsrisiko nicht zuletzt von der Ausbildungsadäquanz abhängt. Wer für seinen Arbeitsplatz überqualifiziert ist, muß im Vergleich mit adäquat beschäftigten Qualifizierten neben einem geringeren Einkommen auch ein deutlich größeres Risiko hinnehmen, arbeitslos zu werden. Eine Ursache hierfür mag darin liegen, daß diese Überqualifizierten im sekundären Arbeitsmarktsegment tätig sind<sup>21</sup>.

<sup>21</sup> Vgl. M. Szydlik (Anm. 12).



## VI. Schlußbemerkungen

Wenn man davon ausgeht, daß sich in modernen Gesellschaften soziale Ungleichheiten vor allem auf dem Arbeitsmarkt manifestieren, reicht es nicht aus, lediglich die Ausbildung oder die Arbeitsmarktposition der Individuen festzustellen. Vielmehr sollte den spezifischen Verbindungen von Angebots- und Nachfrageseite des Arbeitsmarktes nachgegangen werden.

Die Ausbildungsadäquanz ist an sich eine Dimension von sozialen Ungleichheiten. Sie hat aber auch bedeutsame Folgen für weitere Ungleichheitsdimensionen. So ist die Übereinstimmung bzw. Nichtübereinstimmung von Ausbildung und Arbeitsplatz beispielsweise eine wichtige Ursache für Einkommensungleichheiten. Je besser es gelingt, die erworben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direkt einzusetzen, je geringer also die redundanten Qualifikationen sind, um so mehr lohnt sich die Ausbildung und um so höher ist das Arbeitsentgelt. Gleichzeitig werden adäquat beschäftigte Qualifizierte auch deutlich seltener arbeitslos. Es zeigt sich also eine Kumulation von positiven (negativen) Folgen einer Ausbildungs(in)adäquanz.

Das Vorurteil, daß Hochschulabsolventen besonders häufig inadäquat beschäftigt seien, liegt möglicherweise nicht zuletzt am populären Bild vom taxifahrenden Akademiker. Nichtsdestotrotz sind Universitätsabsolventen besonders häufig in der Lage, ihre Kenntnisse und Fähigkeiten auf dem Arbeitsplatz anwenden zu können<sup>22</sup>. Dazu kommt, daß die Arbeitslosenquote von Akademikern genauso deutlich unter dem nationalen Durchschnitt liegt, wie ihre Einkommen wesentlich höher ausfallen<sup>23</sup>. All dies dürfte nicht zuletzt daran liegen, daß sich die Anzahl der Hochschulabsolventen und die

22 Siehe Anm. 1.

23 Vgl. z. B. Klaus Parmentier/Franziska Schreyer/Manfred Tessaring, Aktuelle Befunde zur Beschäftigung und Arbeitsmarktsituation von Akademikerinnen und Akademikern, in: Manfred Tessaring (Hrsg.), Die Zukunft der Akademikerbeschäftigung, Beiträge z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201, Nürnberg 1996. Dabei existieren durchaus Unterschiede zwischen Universitäten und Fachhochschulen, zwischen Fächern bzw. Fächerkombinationen sowie zwischen Studentinnen und Studenten desselben Hauptfaches, die jedoch unterschiedliche Schwerpunkte gesetzt, unterschiedliche Nebenfächer gewählt und unterschiedliche Praktika absolviert haben (z. B. H. Plicht u. a. [Anm. 8]; Josef Brüderl/Thomas Hinz/Monika Jungbauer-Gans, Münchner Soziologinnen und Soziologen im Beruf, in: Sozialwissenschaften und Berufspraxis, 18 [1995] 4, S. 328–345 [siehe auch die anderen Aufsätze in diesem Band]).

der Arbeitsplätze, die eine Hochschulausbildung voraussetzen, in etwa die Waage halten. Prognosen für die Zukunft anzustellen, ist generell ein schwieriges Unterfangen<sup>24</sup>. Zwar spricht der voraussichtlich steigende Anteil der Arbeitsplätze mit Hochschulqualifikationsanforderungen dafür, daß die vergleichsweise günstige Arbeitsmarktsituation von Universitätsabsolventen auch in der Zukunft fortbesteht. Allerdings weisen Faktoren wie z. B. das Einstellungsverhalt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in dem generell eine deutlich größere Chance auf eine adäquate Beschäftigung als in der Privatwirtschaft besteht, darauf hin, daß insbesondere für die jüngeren Jahrgänge der Anteil an überqualifizierten Akademikern zunehmen wird<sup>25</sup>.

Arbeitskräfte mit einer Berufsausbildung sind hingegen einem deutlich größeren Risiko ausgesetzt, einen umfangreichen Teil ihrer beruf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letztendlich nicht anwenden zu können. Ein wesentlicher Grund hierfür liegt in der Tatsache, daß es viel mehr Personen mit einer Berufsausbildung gibt als Arbeitsplätze, die eine Berufsausbildung voraussetzen. Dies verweist auf die Notwendigkeit, über unternehmerische bzw. technologische Innovationen marktfähige Produkte zu entwickeln, die zu anspruchsvollen Arbeitsplätzen führen. Der größere Überqualifiziertenanteil älterer Arbeitskräfte mit einer Berufsaus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im Gegensatz zu den USA – weist auf Probleme bei der beruflichen Fortbildung hin. Obwohl das bundesrepublikanische betriebsnahe duale Ausbildungssystem insgesamt zu einer relativ großen Übereinstimmung zwischen Qualifikation und Arbeitsplatz beiträgt, belegen die Ergebnisse für die USA die besondere Bedeutung von on-the-job-Training. Damit ist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nicht zuletzt ein Plädoyer für die Förderung von Weiterbildung und Umschulungen zu halten, die möglichst betriebsnah erfolgen sollten. Hier wären vor allem auch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eingeschränkten Weiterbildungskapazitäten von Klein- und Mittelbetrieben erfolgversprechend<sup>26</sup>.

Sowohl ost- als auch westdeutsche sowie ausländische Frauen und Männer weisen deutliche Diskrepanzen zwischen Ausbildung und Arbeitsplatz auf. Die meisten dieser inadäquat Beschäftigten sind überqualifiziert und können ihre beruflichen

24 Vgl. ebd.

25 Vgl. F. Büchel (Anm. 8).

26 Auf problematisch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Ausbildungssituation von Jugendlichen geht bspw. Erich Raab in diesem Heft ei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kaum einsetzen. Allerdings existieren zwischen diesen sechs Arbeitnehmergruppen zum Teil große Unterschiede sowohl hinsichtlich des Überqualifikationsrisikos als auch bezüglich der Folgen einer Ausbildungsinadäquanz für weitere arbeitsmarktvermittelte soziale Ungleichheiten. Frauen sind generell häufiger inadäquat beschäftigt als Männer, und Ausländer haben im Vergleich zu Deutschen wesentlich schlechtere Chancen, ihre beruflichen Kenntnisse und Fähigkeiten auf ihren Arbeitsplätzen anzuwenden. Dies gilt auch für die zweite Ausländergeneration, mehr jedoch für die erste.

Ostdeutsche Arbeitnehmer haben ein höheres Überqualifikationsrisiko als westdeutsche. Gleichzeitig müssen die inadäquat beschäftigten Ostdeut-

schen auch höhere Einkommenseinbußen in Kauf nehmen. Die Veränderungen aufgrund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führen dazu, daß der Anteil der überqualifizierten Ostdeutschen angestiegen ist. Dies ist ein Hinweis darauf, daß Qualifikationen, di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worben wurden, nur eingeschränkt in der ‚neu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wendbar sind. Ein solcher Trend läßt sich für Westdeutsche nicht feststellen. Eher ist das Gegenteil der Fall. Trotzdem ist es auch der Mehrheit der qualifizierten Ostdeutschen gelungen, weiterhin einer – mehr oder weniger – angemessenen Tätigkeit nachzugehen. Allerdings hatten die wenigen ostdeutschen Unqualifizierten kaum Chancen, ihren Arbeitsplatz zu halten bzw. eine neue Stelle zu finden.

문서 번호 52

신연방주 내 계속교육을 위한 상담.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 제도의 발전 및 성과

1999 년

담당자 / 기관: 디트리히 하르케; 하인리히 크뤼거; 연방직업교육원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지역에서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 제도의 발전과 성과에 관해 연방직업교육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도 계속교육을 위한 자문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신연방주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프로그램 외에, “계속교육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계속교육상담소의 구축”이라 불리는 시험모델 프로젝트 (1991 년도-1994 년도 시행)가 특히 현지에 계속교육상담소를 창립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사회기금(ESF)의 재원 및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이 사업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작센-안할트주와 튀링엔 주에 한 곳의 상담소, 그리고 작센 주에는 두 곳의 상담소를 세웠다. 구동독지역의 모든 상담소는 서독지역의 상담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직업교육연구원을 통해 자료수집 평가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프로그램이 시작된 초기에 농촌지역에서 대체적으로 회의적이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대부분의 계속교육상담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 년도의 경우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 중 평균 55 퍼센트가 실업자였다.

출처: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Heft 45



Wissenschaftliche Diskussionspapiere

Heft 45

Dietrich Harke und Heinrich Krüge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ntwicklung und Leistungen unterstützender Strukturen**

**für die Weiterbildung**

Herausgeber: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Der Generalsekretär

	<b>Inhalt</b>	<b>Seite</b>
	<b>Vorwort</b>	<b>3</b>
	<b>Inhalt</b>	<b>5</b>
	<b>Kurzfassung</b>	<b>9</b>
	<b>Einleitung</b>	<b>11</b>
<b>1</b>	<b>Ziele und Leistungen von Weiterbildungsberatung</b>	<b>11</b>
1.1	Entwicklungssetappen und Ziele von Weiterbildungsberatung	13
1.2	Aufgabenfelder und Leistungen von Weiterbildungsberatung	15
<b>2</b>	<b>Aufbau von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b>	<b>20</b>
2.1	Das Modellprojekt des BMBW "Aufbau von kommunal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mit integrierter Weiterbildungsdatenbank"	20
2.2	Arbeit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23
2.3	Rahmenbedingungen des Arbeitsmarktes und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25
2.3.1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 Bedingungen	26
2.3.2	Teilnehmer und Akzente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29
2.4	Probleme beim Aufbau und bei der Konsolidier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32
<b>3</b>	<b>Positionen und Selbstverständnis von Weiterbildungsberatung</b>	<b>32</b>
3.1	Drei Positionen von Weiterbildungsberatung	32
3.2	Weiterbildungsberatung und regionale Entwickl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35

3.2.1	Gremien und Arbeitsformen	35
3.2.2	Aufgaben und Leistungsmöglichkeiten vo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39
3.2.3	Beratung von Unternehmen - Qualifizierungsberatung	40
3.3	Weiterbildungsberatung und Fragen der Qualität	42
3.3.1	Bewertungsmaßstäbe für die Qualität von Weiterbildungsangeboten	41
3.3.2	Einwirkungen auf die Qualität von Weiterbildung	45
3.3.3	Qualität der Beratungsarbeit	46
3.4	Bezüge der Weiterbildungsberatung zur regionalen Arbeitsmarkt- und Wirtschaftspolitik	49
4	Arbeitsergebnisse von Beratungsstellen in <b>den neuen Ländern</b>	53
4.1	Gesamtergebnisse aller in die BIBB-Dokumentation einbezogenen Stellen	54
4.1.1	Erhebungszeiträume und beteiligte Stellen	54
4.1.2	Allgemeine Daten	56
4.1.3	Sozialstatistik der Ratsuchenden	60
4.1.4	Beratungsschwerpunkte	71
4.2	Drei Beratungsstellen - Entwicklungen und Ergebnisse	83
4.2.1	Stralsund	84
4.2.2	Pritzwalk	92
4.2.3	Leipzig	99
4.3	Zusammenfassung von Ergebnissen und Auswirkungen der Arbeit	106

<b>5</b>	<b>Perspektiven</b>	<b>109</b>
	<b>Literatur</b>	<b>114</b>
	<b>Anhänge</b>	<b>123</b>
	Anhang A	123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einzelnen Bundesländern	
A1	Brandenburg	124
A2	Mecklenburg-Vorpommern	126
A3	Sachsen	128
A4	Sachsen-Anhalt	132
A5	Thüringen	134
A6	Berlin	136
	Anhang B	
	Dokumentationsinstrumente der Weiterbildungsberatung	143
B1	Erhebungsbogen Weiterbildungsberatung	144
B2	DOKEVI	147
	AnhangC	157
	Abkürzungsverzeichnis	158
	Anschriften der im Text aufgeführten Beratungsstellen	160



## Kurzfassung

Weiterbildungsberatung wurde in den neuen Ländern erst nach der deutschen Vereinigung aufgebaut. Wegen des hohen Qualifizierungsbedarfs nach 1990 und der immens ausgeweiteten beruflichen Weiterbildung gab es ein starkes Interesse der Bevölkerung an mehr Markttransparenz. Neben eigenständigen Entwicklungen in einzelnen Bundesländern war es insbesondere ein übergreifendes Modellprojek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MBW), das wichtige Impulse für die Gründ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in allen neuen Ländern gab. Das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hat durch Entwicklung eines Dokumentationssystems und regelmäßige Datenauswertungen zur Unterstützung von Beratungsstellen und zur Berichterstattung über die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beigetragen.

Weiterbildungsberatung hat sich in den neuen Ländern als ein hilfreicher Bürgerservice und als ein wirksames Instrument zur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 und der regionalen Arbeitsmarktpolitik etabliert. Sie hat bei den Bürgern viel Anklang gefunden, die Nachfrage und Akzeptanz ist durchgängig hoch, abgesehen von anfänglichen Vorbehalten in ländlichen Region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haben ein gemeinsames Grundverständnis ihrer Arbeit hinsichtlich ihrer Orientierung an den Interessen und Belangen der Ratsuchenden, sie unterscheiden sich aber in ihren Konzepten. Dabei geht es insbesondere um die jeweiligen Zielgruppen, um das Verhältnis von Weiterbildungsberatung zur regionalen Arbeitsmarkt- und Wirtschaftspolitik und um Fragen der Beteilig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 an der Regionalentwicklung.

Wichtige Leistungen der Beratungsstellen sind:

- o Information, Orientierungs- und Entscheidungshilfe in Bildungsfragen und anderen Lebensbereichen zu geben
- o die Transparenz im Weiterbildungsbereich zu erhöhen, z.B. durch die Herausgabe von Weiterbildungskatalogen und die Führung regionaler Datenbanken
- o Bildungsinformation und Bildungswerbung durchzuführen
- o Bildungsträger und Bildungsverantwortliche zu beraten und auf eine Verbesserung des Bildungsangebotes hinzuwirken
- o durch Kooperation mit den regionalen Akteuren aus Wirtschaft, Politik und Verwaltung zur Regionalentwicklung beizutragen.

Wichtige Ergebnisse aus der BIBB-Dokumentation von Beratungsstellen in den neuen Ländern sind:

In den meisten Beratungsstellen hat die Zahl der Ratsuchenden (RS) in den letzten Jahren deutlich zugenommen und sich auf hohem Niveau eingeepegelt. Bei den Ratsuchenden überwiegen im Stellendurchschnitt die Frauen mit 60%, ab 1996 ist ihr in den Vorjahren wesentlich höherer Anteil von 2/3 auf diesen Wert gesunken. Mehr als die Hälfte der Beratenen (55%) waren 1997 im Stellendurchschnitt arbeitslos, es gibt aber deutliche regionale Unterschiede: die Anteile an den unterschiedlichen Standorten schwanken zwischen etwa 45 und 70%.

Als Informationsquellen über die Beratungsmöglichkeit haben die Presse (fast 30%), Initiativen/Beratungsstellen (um 20%) und Weiterbildungseinrichtungen (knapp 20%) die größte Bedeutung.

Die Ratsuchenden in den neuen Ländern waren von ihrer Schul- und Berufsbildung überwiegend gut qualifiziert, um 60% mit dem Abschluß der 10. Klasse und fast 20% mit dem Abitur. Fast 90% hatten einen beruflichen Abschluß.

Beratungsschwerpunkte waren 1997 - wie in den Vorjahren - Fortbildungen (60%). Umschulungen haben auf 36% abgenommen. Allgemeine Weiterbildungen lagen weiter bei über 10%. Das Nachholen von Schulabschlüssen oder der Zugang zu Fachhochschulen oder Hochschulen wurden mit insgesamt 12-13% etwa gleichbleibend häufig besprochen. Bei Gesprächen zur beruflichen Bildung standen 1997 solche zum kaufmännisch-verwaltenden Bereich mit 35% an erster Stelle, es folgte der gewerblich-technische mit 30%; der Gesundheits-, Sozial- und Erziehungsbereich hat seit 1995 von 32% auf 25% in 1997 abgenommen, hingegen hat die Datenverarbeitung sich in diesem Zeitraum von 7% auf 12% gesteigert.

Bei einem zunehmenden Teil der Ratsuchenden erschwerten Barrieren und Probleme eine Weiterbildungsteilnahme: 1997 fehlten 39% der Ratsuchenden passende Angebote. Das bedeutet einen deutlichen Anstieg seit 1995 und steht im Einklang mit den Einschränkungen der AFG-geförderten Weiterbildung. Aus der zunehmenden Arbeitslosigkeit und der Resignation vieler Ratsuchenden resultierte eine verstärkte Beratung in Hinblick auf ehrenamtliche Tätigkeiten und sinnvolle Freizeitaktivitäten.

Die vorgestellte Auswahl aus den Gesamtergebnissen aller in die BIBB-Dokumentation einbezogenen Stellen wird im Bericht noch durch die Entwicklung und Ergebnisse der Stellen Stralsund, Pritzwalk und Leipzig ergänzt und veranschaulicht.

Die Perspektiven von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sind — ähnlich wie in den westlichen Standorten - durch die Diskrepanz zwischen dem steigenden Bedarf an Beratung und der Mittelknappheit öffentlicher Haushalte gekennzeichnet. Als stabilisierendes Element hat sich das Engagement einzelner Bundesländer, wie Brandenburg und Mecklenburg-Vorpommern erwiesen. Wichtige Aufgabenfelder bleiben die Beteiligung an der Qualitätsdiskussion, die Mitwirkung an der Regionalentwicklung und eine intensive regionale und überregionale Kooperation der Beratungsstellen.

## 2 Aufbau von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it den gesellschaftlichen und wirtschaftlichen Umbrüchen seit der deutschen Vereinigung und dem dadurch ausgelösten Informations- und Orientierungsbedarf der Bürger stellte sich die Frage, wie die Kommunen, Landkreise oder Länder darauf reagieren sollten. Eine Antwort war die Einricht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Die unterschiedlichen Entwicklungen in den einzelnen Bundesländern werden im Anhang A dieses Bandes beschrieben. Eine besondere Rolle im Sinne einer Initialzündung spielte bei der Einrichtung von Beratungs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 Modellprojek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 2.1 *Das Modellprojekt des BMBW "Aufbau von kommunal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mit integrierter Weiterbildungsdatenbank "*

Die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ostdeutschen Bundesländern wurde von 1991 bis 1994 durch ein Modellprojekt des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wesentlich gefördert<sup>17</sup> - im folgenden nur BMBW-Projekt genannt. Aus einer Vorstudie war bekannt, daß in den ostdeutschen Bundesländern eine hohe Weiterbildungsbereitschaft bestand und der deutliche Wunsch nach mehr Information und Beratung über Weiterbildungsmöglichkeiten<sup>18</sup>. Daraufhin wurde unter der Trägerschaft der Bildungsberatung der Stadt Köln ein Projekt zur Einricht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initiiert und - getragen vom Norddeutschen Verbund - ein damit abgestimmtes Parallelprojekt des BMBW<sup>19</sup> zum Aufbau von Weiterbildungsdatenbanken, die in diese Stellen integriert werden sollten.

Die Zielsetzung des Projekts war es, mit kollegialer Hilfestell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und Weiterbildungsdatenbank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den Aufbau von sechs kommunalen, am regionalen Bedarf orientiert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zu initiieren und fachlich zu begleiten. Dazu gehörte auch die Erschließung von finanziellen Fördermöglichkeiten, vor allem aus ESF-Mitteln und ABM-Mitteln, aus Landesmitteln und Eigenmitteln der Kommunen/Kreise. Jede Stelle erhielt ein durch das BMBW finanziertes „Starter-Paket“, d.h. eine DV-Basisausstattung zum Aufbau einer Weiterbildungsdatenbank sowie die Datenbank-Software WISY. Der Norddeutsche Verbund Weiterbildungsdatenbanken Hamburg gewährte im Rahmen des Parallelprojektes die erforderliche Beratung und Hilfestellung beim Aufbau und Betrieb der neuen Datenbanken<sup>20</sup>.

<sup>17</sup> Vgl. zu diesem und dem folgenden Klevenow u. a. 1994

<sup>18</sup> Kuwan. 1991, S. 32: "Drei von vier Befrag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ünschen sich mehr Information und Beratung über ihre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sup>19</sup> BMBW-Modellprojekt „Entwicklung und Erprobung von Weiterbildungsdatenbanken in Bildungsberatungs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up>20</sup> Vgl. Plum und Horak, 1993

Je eine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 wurde i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eingerichtet, in Sachsen zwei. Es wurden die folgenden Kommunen und Kreise ausgewählt und die dort geschaffenen Stellen wurden jeweils von einer westlichen Partnerstelle betreut (in Klammern): Pritzwalk (Köln), Stralsund (Hamburg), Magdeburg (Münster), Erfurt (Essen), Leipzig (Köln), Kreis Hoyerswerda (Kreis Gütersloh). Dem Projekt assoziiert waren die Beratungsstellen Rostock, Dresden und Löbau.

Schwerpunkte in der Arbeit des BMBW-Projekts waren<sup>21</sup>:

- o Unterstützung der neuen Beratungsstellen bei den Planungen und vielfältigen Problemen in der Aufbauphase;
- o Fortbildung des Personals der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vor allem durch Klausurtagungen, Weiterbildungsseminare, Hospitationswochen und Arbeitsbesuche;
- o Erfahrungsaustausch und Zusammenarbeit aller Beteiligten sowie Herausgabe einer Projektzeitung - diese wurde nach dem Projektende noch in drei Arbeitsgruppen "Beratung/ Beraterweiterbildung", "Öffentlichkeitsarbeit/ Bildungswerbung" und "Datenbanken" eine Zeitlang weitergeführt;
- o Aufbau einer einheitlichen Dokumentation für Beratungsgespräche in einer Arbeitsgruppe unter Federführung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Das BIBB übernahm auch die rechnerische Auswertung der Daten und leistete Hilfe bei der Analyse der Ergebnisse.

Die Erfahrungen aus dem BMBW-Projekt sind in einem Abschlußbericht und in einem "praktischen Leitfaden für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in öffentlicher Verantwortung" enthalten<sup>22</sup>. Kernpunkte der Projektbewertung durch die leitende Kölner Stelle sind<sup>23</sup>:

- o Die Zielstellung der Errichtung von sechs kommunal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wurde umgesetzt. Die Stellen haben jeweils ein eigenständiges und am regionalen Bedarf orientiertes Aufgabenprofil entwickelt und wirken aktiv mit bei der Ausgestaltung von Kooperationsnetzen und der überregionalen Zusammenarbeit in der Weiterbildungsberatung.
- o Das Konzept der partnerschaftlichen Hilfestellung durch erfahrene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hat sich bewährt. Die Arbeitsansätze der neuen ostdeutsch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haben das Aufgabenspektrum der Weiterbildungsberatung erweitert (z.B. arbeitsmarktfördernder Ansatz, Beratung in

---

<sup>21</sup> Vgl. zum folgenden Klevenow u. a. 1994

<sup>22</sup> Klevenow u. a. 1994 sowie Stadt Köln 1994

<sup>23</sup> Vgl. Klevenow u. a. 1994, S. 23/24

überwiegend ländlichen Räumen) und haben die bundesweite Fachdiskussion - u.a. auf den jährlichen Fachtagungen des Deutschen Städtetages - befruchtet.

- o Beim Aufbau der neue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war von Vorteil, daß in ausreichendem Maße Fördermittel zu Verfügung standen, um die Beratungsstellen (auch technisch) gut auszustatten. Das ermöglichte es ihnen, schon nach kürzester Zeit erste regionale Weiterbildungskataloge herauszugeben und sich in ihren Kommunen/Kreisen zu profilieren.
- o Insgesamt hat das Projekt für die fachliche Weiterentwicklung und Transparenz in der Weiterbildungsberatung (bundesweit) und damit sicherlich auch für ihre Absicherung in den alten Bundesländern wichtige Akzente gesetzt (z.B. Initiierung einer wissenschaftlichen Weiterbildung für Weiterbildungsberater/-innen). Dabei sind auch die Vielzahl der entstandenen Kooperationsbeziehungen zu Landesprojekten und -initiativ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der wechselseitige Erfahrungsaustausch (Ost und West) von Bedeutung.

Aber auch Probleme und Schwierigkeiten in der Projektumsetzung wurden deutlich und werden von Mitarbeitern des Norddeutschen Verbundes<sup>24</sup> beschrieben:

- o die Klärung der organisatorische Anbindung in den Kommunen war mit erheblichen Verzögerungen verbunden und zeigte oft eine große Starrheit der kommunalen Organisationsabläufe;
- o die Finanzierung durch ABM und ESF-Mittel kam auch nur sehr verzögert in Gang, z.T. bedingt durch Vorbehalte von Arbeitsämtern (u.a. Konkurrenzbefürchtungen) oder bei Anträgen auf ESF-Förderung durch unterschiedliche Ausführungsbestimmungen sowie Aufspaltung der Zuständigkeiten im Weiterbildungsbereich auf mehrere Ministerien. Weitere Schwierigkeiten der Finanzierung zeichneten sich durch die verschärften Förderbedingungen und die auf ein Jahr beschränkten Bewilligungszeiträume ab. Als günstiger werden die Perspektiv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und Mecklenburg-Vorpommern eingeschätzt, wo die Beratungsstellen in die Planungen der Landesministerien integriert sind.

Die festgestellten Beeinträchtigungen und die genannten Zukunftseinschätzungen haben sich im Verlauf der folgenden Jahre leider bestätigt. Vier Jahre nach Abschluß des Projektes arbeiten die Beratungsstellen in Pritzwalk (Brandenburg), Stralsund und Rostock (Mecklenburg-Vorpommern) und Magdeburg (Sachsen-Anhalt) noch, aber die Stellen in Sachsen (Leipzig, Hoyerswerda, Dresden, Löbau) und Thüringen (Erfurt) mußten ihre Tätigkeit mangels weiterer Finanzierung entweder ganz einstellen oder rigorose Einschränkungen hinnehmen<sup>25</sup>.

<sup>24</sup> Vgl. zum folgenden Plum und Horak 1993, S. 104

<sup>25</sup> Vgl. Anhang A zur Entwicklung in den einzelnen Bundesländern

## 2.2 Arbeiten des Bundesinstituts für Berufsbildung

Im Zusammenhang mit der Durchführung des BMBW-Modellprojektes hatte das BIBB Gelegenheit, die Arbeit der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wissenschaftlich zu unterstützen. Ähnlich wie es in den kooperierenden westdeutschen Beratungsstellen praktiziert wurde, sollte auch in den neu errichteten ostdeutschen Stellen eine Ratsuchenden-Statistik bzw. Dokumentation der Beratungsgespräche geführt werden. Notwendig war, hierfür ein einheitliches, relativ differenziertes und gut handhabbares Instrumentarium zu erstellen, das aussagekräftige und auch vergleichbaren Ergebnisse erbringen und den Stellen eine Grundlage für die Evaluation ihrer Arbeit liefern sollte.

Im November 1992 wurde eine Arbeitsgruppe "Erhebungsbogen" eingerichtet, in der das BIBB, die für das BMBW-Projekt verantwortliche Kölner Beratungsstelle, die daran beteiligten ostdeutschen Beratungsstellen und die Hamburger WBB vertreten waren. In diesem Gremium wurde ab Januar 1993 unter Federführung des Bundesinstitutes ein Dokumentationsinstrument für Beratungsgespräche erstellt, das die speziellen Erfordernisse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berücksichtigte. Vom BIBB konnte dabei auf umfangreiche Vorarbeiten zurückgegriffen werden, die sich in einem in den Vorjahren entwickelten Instrumentarium DOKEVI<sup>26</sup> niedergeschlagen hatten. Daneben bildete der schon länger verwendete Erhebungsbogen der Kölner Beratungsstelle eine weitere Grundlage für das Erarbeiten eines neuen Erhebungsbogens für die ostdeutschen Beratungsstellen.

Der in der Arbeitsgruppe verabschiedete Erhebungsbogen besteht aus drei größeren Blöcken mit der in der Übersicht Nr. 1 gezeigten Struktur<sup>27</sup>.

### Übersicht Nr. 1: Struktur des Erhebungsbogens

<p><b>Allgemeines</b>  <i>m</i>Beratungsort/-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eratungsdauer</i></li> <li>• <i>Info-Quelle über die Beratung</i></li> </ul> <p>-----</p> <p><b>Sozialstatistik</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Geschlecht</i></li> </ul> <i>m</i>Alter  <i>m</i>Familienstand  <i>m</i>Schulbild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erufsbildung</i></li> <li>• <i>Erwerbslage</i></li> </ul> </p></p>	<p><b>Beratungsschwerpunkt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eratungswünsche</i>  <i>m</i> Bereiche bei Beratungen zur beruflichen Bildung</li> <li>• <i>Beratungen zu Veränderungen in Beruf oder Lebensführung</i>  <i>m</i> Barrieren/Probleme bei geplanten Aktivitäten  <i>m</i> Folgeaktivitäten  <i>m</i> Datenbanknutzung bei der Beratung</li> </ul>
---	---

<sup>26</sup> Vgl. Anhang B2 zum DOKEVI

<sup>27</sup> Der komplette Erhebungsbogen ist im Anhang B1 abgedruckt

Der Block *Allgemeines* liefert vor allem Informationen über den Beratungsort, den benötigten Zeitaufwand für die Beratung - de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dividuellen Daten und der Beratungsschwerpunkte besonders aussagekräftig ist - und über den Zugang zur Beratungsstelle (Info-Quelle).

Mit dem *sozialstatistischen Teil* wird die Struktur der RS erfaßt. Hier konnte eine dem Kölner und dem Hamburger Erhebungsbogen vergleichbare Grundstruktur beibehalten werden, einige Punkte mußten auf die 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bgestellt oder erweitert werden, z. B. auf die Schul- und Berufsabschlüsse der früheren DDR.

Mit dem Block *Beratungsschwerpunkte* werden auch einige qualitative Leistungen von Weiterbildungsberatung dokumentiert, soweit dies bei einem kurzen, für den täglichen Gebrauch bestimmten Instrument vertretbar erschien. Es werden neben Weiterbildungszielen auch angestrebte Veränderungen im Beruf und in der persönlichen Lebensführung sowie Barrieren und Probleme bei vorgesehenen Aktivitäten in die Dokumentation einbezogen.

Dem Erhebungsbogen liegt ein ganzheitliches Beratungsverständnis zugrunde, das nicht nur die berufliche Situation, sondern auch die Lebenssituation der RS mit ihren sozialen Aspekten umfaßt. Er ist vom erforderlichen Zeitaufwand für eine kontinuierliche Dokumentation geeignet.

Der Erhebungsbogen wurde aufgrund der Erfahrungen der Beratungsstellen bis 1994 zweimal überarbeitet - ab Januar 1994 wurde mit der Fassung 03 gearbeitet (vgl. Anhang). Bei den Nutzern handelte es sich nicht ausschließlich um ostdeutsche Beratungsstellen, sondern von 1992 bis 1995 wurde auch ein Großteil der von der Hamburger Beratungsstelle durchgeführten ausführlichen persönlichen Beratungen mit diesem Instrumentarium erfaßt und ausgewertet<sup>28</sup>. 1997 wurden dem BIBB auch die auf dieser Basis erhobenen Daten der Münchener Beratungsstelle zur Auswertung übermittelt.

Parallel zur Entwicklung und Revision des Erhebungsbogens "Weiterbildungsberatung" wurden vom BIBB - unterstützt von der Forschungsabteilung der Stiftung Berufliche Bildung Hamburg und der Berliner Softwareentwicklung S.E.M. - weitere Instrumente zur Dokumentation und Auswertung erstellt. Zu diesem „BIBB-Instrumentarium" gehören mehrere Teile, die in der nachfolgenden Übersicht zusammengefaßt sind:

Übersicht Nr. 2: Bestandteile des BIBB-Instrumentariums zur Dokumentation und Auswertung von Beratungsgesprächen

1. Der Erhebungsbogen "Weiterbildungsberatung" sowie ein Dateneingabeprogramm dafür, um eine DV-Auswertung zu ermöglichen.

<sup>28</sup>\* Vgl. auch Meyer 1997, S. 229

2. Ein auf dem statistischen Programm SPSS basierendes standardisiertes Auswertungsprogramm: damit wurden die Dokumentationen der beteiligten Beratungsstellen halbjährlich vom BIBB ausgewertet.

3. Ein DV-Zählprogramm, damit können die Beratungsstellen einfache Auswertungen ihrer Daten selbst vornehmen.

4. Das Formular "Veränderungen und Trends": es wurde von den Beratungsstellen halbjährlich per Hand ausgefüllt und diente dazu, allgemeine Entwicklungen in der Beratungsarbeit und in der Situation der Stelle sowie deren Hintergründe zu bestimmen.

Von den Beratungsstellen wurden die dokumentierten Beratungsgespräche mit Hilfe des Eingabeprogrammes auf DV übernommen; die Dateien wurden halbjährlich an das BIBB geschickt. Dort erfolgte die standardisierte Auswertung.

Die Stellen erhielten die Ergebnisse als aufbereitete Statistik, in der Form von einfachen Häufigkeitsverteilungen, Kreuztabellen und Grafiken. Es wurde eine Detailauswertung für die jeweilige Stelle und eine Gesamtauswertung mit den zusammengefaßten, wichtigsten Daten aller Stellen bereitgestellt.

Die vom BIBB entwickelten Instrumente dienen vor allem dazu, die individuellen Beratungen zu dokumentieren und deren Inhalte sowie den Kreis der Ratsuchenden transparent zu machen. Sie erlauben eine differenzierte statistische Darstellung der Beratungstätigkeit.

Diese Dokumentation der Beratungsarbeit wurde auch nach dem Ende des BMBW-Projekts weitergeführt und bildete für die beteiligten Stellen die Grundlage für eine Evaluation ihrer Arbeit und bis 1998 im Berufsbildungsbericht die Datenbasis für den Berichtsteil zu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Die Dokumentationen der Beratungsstellen lieferten auch die Daten für diesen Band.

### **2.3 Rahmenbedingungen des Arbeitsmarktes und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Um die Entwicklung de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besser zu verstehen, ist ein kurzer Rückblick auf das Umfeld hilfreich, auf die Rahmenbedingungen der Arbeit in den Jahren zwischen 1993 und 1996 und auf die Situation der Weiterbildung.



### 23.1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 Bedingungen:

Die im Oktober 1990 besiegelte staatliche und gesellschaftliche Einheit Deutschlands führte in den neuen Ländern zu einem durchgreifenden Umbruch gesellschaftlicher Verhältnisse. Die Rückkehr zum Privateigentum mit seiner entsprechenden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Gliederung und dem Ziel der Herstellung einer am Weltmarkt konkurrenzfähigen Wirtschaft bewirkte einschneidende Umwälzungen für die Lebens- und Arbeitsbedingungen der Arbeitnehmer - vor allem durch den massiven Abbau unrentabler Arbeitsplätze. Dies bedeutete zunächst in den Jahren 1991-1992 einen starken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bzw. einem spürbaren Rückgang der Erwerbstätigkeit - als Transformationsarbeitslosigkeit bezeichnet<sup>29</sup>

Es waren vor allem Frauen und ältere Arbeitnehmer von den verminderten Chancen am Arbeitsmarkt betroffen. Waren im April 1991 von 8,7 Mio. Erwerbspersonen noch 89% erwerbstätig und 11% erwerbslos, so waren bereits im Januar 1992 von nunmehr 8,4 Mio. Erwerbspersonen nur noch 83% erwerbstätig und 17% ohne Arbeit. Unter den weiblichen Erwerbspersonen waren 1991 86% erwerbstätig und 14% erwerbslos, zu Beginn 1992 waren nur noch 78% (!) erwerbstätig und 22% ohne Arbeit<sup>30</sup>. Die Erwerbsbeteiligung von Frauen in den neuen Ländern lag aber damit noch immer deutlich über der in den alten Länder und in den EG-Staaten - ermöglicht durch umfassendere Möglichkeiten der außerhäuslichen Kinderbetreuung<sup>31</sup>. Als weiterer Grund für die hohe Erwerbsbeteiligung der Frauen wird vor allem das Interesse an einem eigenen Arbeitseinkommen genannt. "Berufstätigkeit hat aber auch aus historischen Gründen - Wertstruktur der ehemaligen DDR - für Frauen eine größere Bedeutung"<sup>32</sup>.

Wirtschaftsforscher waren sich darin einig, daß der einst hohe Stand der Erwerbstätigkeit unter privatwirtschaftlicher Regie nicht zu erreichen sein würde. Es würde neben der Weiterbildung weiterer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scher Maßnahmen bedürfen, um einen Teil der Erwerbstätigen dem Arbeitsmarkt zu entziehen, z.B. durch Vorruhestandsregelungen. Das insgesamt geringere Arbeitsplatzangebot wirkte sich auf die Entwicklung der "Stillen Reserve" aus, d.h. auf den Rückzug Erwerbsloser vom Arbeitsmarkt - in der amtlichen Diktion: "Nichterwerbstätige, die Arbeit suchen oder bei einem besseren Arbeitsmarkt suchen würden, ohne beim AA arbeitslos gemeldet zu sein". Im Jahr 1993 wurden nach Schätzungen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 jahresdurchschnittlich 150. 000 Personen zu diesem Kreis gerechnet<sup>33</sup>.

<sup>29</sup> „Die Arbeitslosigkeit im Osten ist - im Unterschied zu Westdeutschland - durch einen gesellschaftlichen Umbruch erzeugt...“(Vogel 1996, S. 30). Die westdeutsche Terminologie kennt z. B. saisonale, konjunkturelle und strukturelle Arbeitslosigkeit.

<sup>10</sup> Vgl., Wirtschaft u. Statistik, 2/1993, S.93-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sowie ANBA, "Arbeitsmarkt 1993", S. 181 ff.

<sup>11</sup> Vgl. Wirtschaft und Statistik, 2/93, S. 92/3

<sup>12</sup> ANBA, "Arbeitsmarkt 1993", S. 181 ff.

" ANBA, "Arbeitsmarkt 1993", S. 135

Ein Bündel von Maßnahmen zur Arbeitsmarkt- und Wirtschaftspolitik diente dazu, den wirtschaftlichen Umstellungsprozeß in den neuen Ländern zu fördern und seine Folgen zu mildern<sup>34</sup>. Die Mittel für die Instrumente der Arbeitsmarktpolitik gemäß dem AFG wurden ab 1990 etwas und 1992 sehr stark aufgestockt, und der Förderrahmen wurde erheblich erweitert<sup>35</sup>. Die folgende Tabelle veranschaulicht den immensen Anstieg und die ab 1994 wieder folgende Reduzierung der für Fortbildung und Umschulung sowie für Einarbeitung bereitgestellten Mittel. Gleichzeitig wird - vor allem 1991/92 - an den hohen Eintrittszahl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deutlich, in welchem Umfang die Weiterbildungsmöglichkeiten auch wahrgenommen wurden.

Tabelle 1: Eintritte in und Ausgaben der BA für berufliche Weiterbildung (Fortbildung, Umschulung, Einarbeitung)

Jahr	Eintritte (Tsd.)		Ausgaben (Wird. DM)	
	insgesamt	davon Ost	insgesamt	davon Ost
1989	490	—	5,3	—
1990	672	98	6,5	0,2
1991	1.386	892	6,9	4,7
1992	1.462	887	18,9	11,3
1993	642	294	17,4	10,3
1994	593	286	13,4	7,0
1995	659	257	14,8	7,3
1996	648	269	15,4	7,2

Anders als in Westdeutschland, wo die arbeitsmarktpolitischen Förderinstrumente im wesentlichen zielgruppenorientiert eingesetzt werden, stand die Arbeitsmarktpoliti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or der Aufgabe, den Anpassungsprozeß mit seinen Schwierigkeiten und Härten für die Arbeitnehmer zu überbrücken“<sup>36</sup>, zugleich „aber auch Qualifikationen zu erhalten und neuen Erfordernissen anzupassen“<sup>37</sup>. Durch den Einsatz dieser Mittel fiel auch die registrierte, "offene" Arbeitslosigkeit geringer aus, da die Personen in arbeitsmarktpolitischen Maßnahmen nicht dazu zählen (sogenannte "verdeckte" Arbeitslosigkeit)<sup>38</sup>.

<sup>34</sup> Wirtschaftspolitisch bedeutsam waren: Investitionszulagen und -Zuschüsse, das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besondere Steuererleichterungen, zinsverbilligende Kreditprogramme und verschiedene Bürgschaftsprogramme. Arbeitsmarktpolitisch wirksam wurden vor allem die Vorruhestandsregelung, die Altersübergangsregelung, die Ausweitung von Fortbildung, Umschulung und ABM sowie Kurzarbeit.

<sup>35</sup> Beispielsweise wurde die Teilnahme an beruflicher Weiterbildung dadurch unterstützt, daß es besondere gesetzliche Regelungen gab, die einen leichteren Zugang zu den Förderungshilfen erlaubte, als dies nach dem AFG der Fall war. Vom Juli 1990 bis zum Mai 1991 gab es ein sogenanntes AFG-DDR. Vgl. zu den Sonderbestimmungen: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Bundesanstalt für Arbeit, Nürnberg 1992, S. 19

<sup>36</sup> Sachverständigenrat (SVR), Jahresgutachten 91/92, Ziffer 528, S. 238

<sup>37</sup> SVR, Jahresgutachten 1993/94, Ziffer 275, S. 203

<sup>38</sup> Es handelt sich um Teilnehmer an Fortbildungs-, Umschulungs- und Einarbeitungsmaßnahmen sowie in ABM und Kurzarbeit oder um Personen, die von der Vorruhestandsregelung oder Altersübergangsregelung Gebrauch machten. Zur Definition von verdeckter Arbeitslosigkeit, vgl. Jahresgutachten des SVR 1993/94, Ziffer 116, S. 117.

Ab 1992/1993 wurde zunehmend die Auffassung vertreten, daß der durch den gesellschaftlichen Umbruch erfolgte Wandel im wesentlichen vollzogen sei, auch wenn die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und Mentalitäten noch weit davon entfernt zu sein schien. Doch weisen zahlreiche sozialstatistische Indikatoren und Befunde darauf hin, „daß zunehmend der Prozeß einer strukturellen Angleichung zwischen Ost und West in verschiedenen sozialen Feldern sehr weit vorangekommen ist. Dies gilt für die Neuformierung der Sozialstruktur, für Strukturierungsprozesse am Arbeitsmarkt, aber auch für die sektorale Umgestaltung der Wirtschaftsstruktur in den einzelnen Regionen“<sup>39</sup>. Die soziale Flankierung des Wandels wurde zwar zunächst noch weiter verfolgt, aber quantitativ reduziert und qualitativ differenziert.

Abgesehen von allen Besonderheiten der Transformationsarbeitslosigkeit und der nunmehr wie in Westdeutschland vorhandenen konjunkturellen und strukturellen Arbeitslosigkeit war bereits zu Beginn des Umbruchs klar, daß die Zahl der 9 Vz Millionen Arbeitsplätze, wie sie in der DDR vorhanden war, auch nach einem erfolgreichen Strukturwandel in den neuen Ländern nicht wieder erreicht werden würde<sup>40</sup>. Soweit nicht die Fördermaßnahmen das Ausscheiden aus dem Erwerbsleben ermöglichten, so blieb noch der Rückzug vom Arbeitsmarkt in die Stille Reserve als Möglichkeit offen.

Mit der 10. Novelle des AFG<sup>41</sup> traten Anfang 1993 Bestimmungen in Kraft, die zugleich den Beginn einer länger anhaltenden Sparpolitik bedeuteten. Unter anderem gab es Einschränkungen bei der Qualifizierung, z.B. durch eine Verschärfung der Voraussetzungen bei FuU-Maßnahmen (generelle Zweckmäßigkeitprüfung nach § 34a AFG und Beratungspflicht vor Maßnahmebeginn), den Wegfall der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Vermittlungsaussichten (41a-Maßnahmen; Ersatz: Arbeitsberatung von höchstens 2 Wochen), Einschränkung der Zweit- bzw. Folgeförderung durch Einführung von Pflichtwartezeiten, Absenkung der Förderhöhe bei Einarbeitung, Einschränkung der ABM-Förderung durch eine um 20% verminderte Arbeitszeit. Aufgelegt wurde aber ein bis Ende 1997 wirksames Programm „Produktiver Lohnkostenzuschuß-Ost“, das die Beschäftigung Arbeitsloser im Bereich Umwelt, soziale Dienste und Jugendhilfe vorsah (§ 249h AFG)<sup>42</sup> und das Struktur- und regionalpolitische Ziele verfolgt. ABM-Teilnehmer im Westen werden dagegen meist nur im Bereich der sozialen Dienste beschäftigt.

Auf gesetzgeberischer Ebene folgten weitere Einschnitte beim AFG, und zwar Anfang 1994 mit der Umsetzung des 1. und 2. Gesetzes des Spar-, Konsolidierungs- und

---

<sup>19</sup> Kronauer u. Vogel 1994, S. 77 ff. Für den SVR war der deutlich verlangsamte Beschäftigungsabbau in Ostdeutschland dafür der Indikator, vgl. Jahresgutachten 1992/93 des SVR, Ziffer 141 ff. Gegen Ende 1994 vermerkt der SVR in seinem Gutachten 1994/95, Ziffer 108, S. 93, daß der Beschäftigungsabbau zu Ende ist, daß die Erwerbstätigkeit erstmalig seit 1989 wieder angestiegen ist.

<sup>40</sup> Vgl. SVR Jahresgutachten 1991/92, Ziffer 45, S. 262. Entwicklung: Erwerbstätige 1989: 9,8 Mio.; 1991: 7,2 Mio.; 1993: 6,2 Mio.; 1995: 6,4 Mio. (Quelle: Jahresgutachten des SVR der betreffenden Jahre)

<sup>41</sup> Gesetz zur Änderung von Fördervoraussetzungen im Arbeitsförderungsgesetz und in anderen Gesetzen vom 18. Dezember 1992, BGBI.I S. 2044. Übersicht der Änderungen in: SVR. Jahresgutachten 1993/94, Tabelle 29, S. 112 und MittAB 2/93, S. 276.

<sup>42</sup> SVR, Jahresgutachten 1993/94, Tabelle 31, S.114. Zwischenzeitlich ist das Programm gemäß § 249h AFG bis zum 31.12. 2002 verlängert worden (vgl. Arbeitsförderungsreformgesetz (AFRG) in: Bundesgesetzblatt Jg. 1997, Teil I, Nr. 20 vom 27.3.1997, S. 703)

Wachstumsprogramms sowie Mitte 1994 mit dem sogenannten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Das Unterhaltsgeld (Uhg) bei der Weiterbildung wurde auf die Höhe des Arbeitslosengeldes abgesenkt. Der bisherige Rechtsanspruch auf Uhg wurde aufgehoben, da die Gewährung von Uhg ins Ermessen der Arbeitsämter gestellt wurde. Bei ABM wurde die Bemessungsgrundlage für den Zuschuß an den Träger auf höchstens 90% abgesenkt.

Die sozialverträgliche Komponente in der Arbeitsmarktpolitik der neuen Länder wurde im Untersuchungszeitraum zurückgenommen und stärker nach den im Westen geltenden Grundsätzen ausgerichtet<sup>43</sup>. Der in den Jahren 1994 und 1995 deutlich gewordene Zuwachs bei den Erwerbstätigen ließ diese Reorientierung plausibel erscheinen, zumal sich am Arbeitsmarkt erkennbar Strukturen nach westdeutscher Muster entwickelten. Erwähnt sei hier die Langzeitarbeitslosigkeit. 1996 gab es in Ostdeutschland erneut einen Beschäftigungseinbruch, der jetzt jedoch weitgehend dem Muster in Westdeutschland entsprach<sup>44</sup>.

### 23.2 Teilnehmer und Akzente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Die angestrebte arbeitsmarktpolitische Entlastung durch Anpassung der Qualifikationen schlug sich in der Statistik der Teilnehmer an Weiterbildung nieder. Ab 1991 traten zunehmend Arbeitslose und vermehrt Frauen in Weiterbildungsmaßnahmen ein. Die meisten Personen verfügten über einen mittleren allgemeinbildenden Schulabschluß (Polytechnische Oberschule/POS), und aufgrund der „Ausbildungspflicht“ in der früheren DDR gab es nur einen verschwindend geringen Anteil (4%) von Teilnehmern ohne beruflichen Abschluß<sup>45</sup>. Am stärksten vertreten waren Teilnehmer mittleren Alters (25 bis unter 45 Jahre). Die Dauer der Arbeitslosigkeit von Teilnehmern vor Eintritt in Weiterbildungsmaßnahmen begann zuzunehmen, womit erste Anzeichen von Langzeitarbeitslosigkeit auch bei Teilnahmen an Weiterbildung sichtbar wurden (beginnende Ost-West Angleichung).

Den größten Zulauf fanden Fortbildungsmaßnahmen zur Anpassung beruflicher Kenntnisse (65% in 1991). Ein größeres Gewicht als in den alten Bundesländern hatten auch Umschulungsmaßnahmen, die den starken Bedarf an neu und anders qualifizierten

<sup>41</sup> „In Zukunft muß sich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auch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 ihre Kernaufgaben konzentrieren. Sie soll nicht Ersatzbeschäftigung für Arbeitslose schaffen, sondern den Anschluß der Arbeitslosen an das Berufsleben sichern, die Verbindung dazu wieder herstellen, wenn sie abgebrochen ist, Qualifikationen erhalten und den Erwerb von neuen fördern.“ SVR, Jahresgutachten 1995/96, Ziffer 296, S. 189.

<sup>44</sup> SVR, Jahresgutachten 1996/97, Ziffer 129, S. 104: „Das Muster des Beschäftigungsabbaus entspricht weitgehend dem in Westdeutschland: Besonders deutliche Rückgänge waren im produzierenden Gewerbe, in der Landwirtschaft und beim Staat und den privaten Haushalten zu verzeichnen, weniger stark ausgeprägt war die Abnahme im Bereich Handel und Verkehr.“

<sup>45</sup> 1991: 4%. Alte Bundesländer: 33%. In: Förder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Bericht über die Teilnahme an beruflicher Fortbildung, Umschulung und Einarbeitung im Jahr 1991, Bundesanstalt für Arbeit, Nürnberg, Sept. 1992, S. 23. 1995 wird erstmalig dazu eine Aussage für alle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n getroffen: Knapp 10% hatten keine Berufsausbildung; in den alten Ländern sind es 24%. In: ANBA „Arbeitsmarkt 1995“; S. 164.

Fachkräften nach dem Strukturbruch anzeigten<sup>46</sup>. Das ausgeprägte Interesse an beruflicher Weiterbildung korrespondiert mit einem vergleichsweise geringen an allgemeiner Weiterbildung. Hier zeigt der Ost-West Vergleich eine höhere Teilnahmequote im Westen mit 29% gegenüber nur 17% im Osten<sup>47</sup>. Diese Akzente der beruflichen und allgemeinen Weiterbildung finden sich z.T. auch in den in diesem Band vorgestellten Auswertungen der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Die Gründung von Beratungsstellen zur Weiter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fällt in die Zeit des vorher beschriebenen Wandels in den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und ist gekennzeichnet durch eine nicht mehr primär auf sozialpolitische Effekte angelegte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Auffangbecken für Unterbeschäftigung), sondern durch eine zunehmende Konzentration der Förderung auf Problemgruppen des Arbeitsmarktes. Auch die Weiterbildungsberatung, so wurde befunden, könnte in dieser Situation des sozialen Umbruchs ihren Platz finden<sup>48</sup>, wie denn überhaupt Beratung als Klärungs- und Orientierungsinstanz zu einem wesentlichen Element marktwirtschaftlichen Handelns gehört. Märkte unterliegen einem ständigen Wandel und Veränderungsprozeß, zeigen oft wenig Transparenz, und deshalb ist viel Information vonnöten, will man nicht den Risiken des Marktes unvorbereitet ausgesetzt sein. Gute Beratung mindert Unsicherheiten bei individuellen Weiterbildungsentscheidungen und das Risiko eines Fehlschlags. Wie auf allen Märkten, so befinden sich auch am Bildungsmarkt in der Regel private Anbieter im Konkurrenzverhältnis.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wo marktwirtschaftliches Geschehen vorher nicht existierte, hat sich recht zügig eine große Zahl von Bildungsträgern eingestellt, die für ihre Bildungsmaßnahmen warben. Für viele Weiterbildungsinteressierte, denen marktwirtschaftliche Gepflogenheiten fremd sind, stellte sich dieser Markt als ein undurchsichtiges Gestrüpp dar. Beratung kann und soll hier Transparenz für die Ratsuchenden schaffen.

Dabei ergibt sich für die Beratung neben der Klärung der individuellen Bedürfnisse aber die Schwierigkeit, den regionalen Qualifikationsbedarf zu kennen bzw. zu ermitteln. Denn dieser richtet sich nach den wirtschaftlichen Entscheidungen der Unternehmungen - sie bestimmen in der Hauptsache das Arbeitsplatzangebot. Eine gut informierte Weiterbildungsberatung muß mit den Trägern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Entscheidungen in Kontakt stehen, um z. B. im Vorfeld von Investitionsentscheidungen etwas über den künftigen Qualifikationsbedarf in der Region zu erfahren. Und bei anstehenden Betriebsschließungen kann WBB dabei helfen, die Qualifikationspotentiale der von Entlassung Bedrohten durch ergänzende Qualifizierung zu verbessern und auf andere regional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zuzuschneiden. Auch dazu sind gut Kontakte zu Betrieben und regionalen Entscheidungsträgern von eminenter Bedeutung.

Weiterbildungsberatung muß die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ihrer Arbeit nicht nur kennen, sondern auch versuchen, sie im Interesse ihres

---

<sup>46</sup> 1991: 15%: Alte Bundesländer: 12%. In: ebenda S. 21

<sup>47</sup> Berichtssystem Weiterbildung 1991, S. 15 und Berichtssystem Weiterbildung VI (1994), S. 18..

<sup>48</sup> Vgl. Kuwan: a.a.O., S. 9/10 und Klevenow: a.a.O., S. 1-4. Die Notwendigkeit zum Aufbau von Weiterbildungsberatungsstellen wurde aus den Ergebnissen der Untersuchung von Kuwan abgeleitet.

Auftrages durch Einbindung in entsprechende Gremien und durch Beteiligung an regionale Entwicklungen und Netzwerken mitzugestalten.

#### **2.4 Probleme beim Aufbau und bei der Konsolidierung der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eiterbildungsberatung wurde an den verschiedenen Standor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it z.T. unterschiedlichen inhaltlichen Akzenten und organisatorischen Strukturen eingerichtet. Neben dem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bekannten kommunalen Ansatz, der sich z.B. in Rostock, Leipzig oder Erfurt wiederfand, hat man i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und Sachsen-Anhalt einen anderen Weg beschritten. In diesen Ländern wurde Weiterbildungsberatung unter Landesregie etabliert, in Trägerschaft einer Landesagentur (LASA), in der des Kultusministeriums bzw. des Landesverbandes der Volkshochschulen sowie im Land Mecklenburg-Vorpommern in Trägerschaft einer Landesstelle (WIB). Orientiert an der Trägerschaft bzw. der verwaltungsmäßigen Anbindung der Stellen entwickelten sich auch verschiedenartige Leistungsprofile.

Ein besonderes Merkmal der Weiterbildungsberatung in einigen der neuen Bundesländer ist im Verhältnis zu den alten Bundesländern die viel stärkere inhaltliche Verknüpfung mit der regionalen Arbeitsmarktpolitik oder der Wirtschaftsförderung sowie die häufige Zuordnung zu den einschlägigen Dezernaten - dadurch ergeben sich andere Akzentsetzungen in der Arbeit der Beratungsstellen.

Ein gemeinsames Kennzeichen und Problem der meisten Stellen war und ist, daß das Personal in der Regel auf ABM-Basis oder in anderen zeitlich befristeten Verträgen arbeitet und daß - vor allem seit Einschränkungen der ABM-Förderung - die Finanzierung, die Personalkapazität und damit der Leistungsumfang der Stellen nicht dauerhaft abgesichert sind. Auch der häufig verfolgte Weg einer Mischfinanzierungen durch Mittel des Europäischen Sozialfonds, durch die Länder und die Kommunen oder durch andere Mittel, wie Lohnkostenzuschüsse, hat dieses Hindernis nur z.T. aus dem Weg räumen können.

Damit ist das Hauptproblem bei der Konsolidierung bzw. einer Ausweitung von Weiterbildungsberatung in den neuen Ländern benannt: Unsicherheit d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und bei einigen Standorten mangelnde Kontinuität der Arbeit. Und aus dieser Situation ergeben sich auch Folgeprobleme, die direkte Auswirkungen auf die Qualität der Beratungsarbeit haben können. Wenn mit dem Auslaufen einer befristeten Beschäftigung Mitarbeiter/-innen die Stellen verlassen müssen, dann gehen der Weiterbildungsberatung immer wieder wertvolle Qualifikationen verloren, die mit viel Energie in der täglichen Arbeit und durch vielfältige Fortbildungen aufgebaut wurden. Und auch für die regionalen Kooperationspartner der Beratungsstellen bilden häufiger wechselndes Personal und eine geringe Absicherung der Stellen Hemmnisse für eine kontinuierliche Zusammenarbeit.

문서 번호 53

독일노동실무협회(BAG Arbeit) 20 년 - 연표

2009 년 1 월

담당자 / 기관: 트루다 앤 스미스(Truda Ann Smith)의 논문

내용:

이 문서는 2009 년으로 창립 20 주년을 맞는 독일노동실무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이 협회는 1989 년 1 월 20 일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협회의 목적은 1989 년 1 월에 작성된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협회의 목적은 임금보조금이 직접 지급되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 또는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협회의 창립 이후부터 2009 년까지의 기간 동안 발전과 주요 활동이 요약 정리되어 있다.

출처: BAG Arbeit e.V.







## 20 Jahre bag arbeit - eine Chronologie

Ein Beitrag von Truda Ann Smith

*In diesem Jahr feiern wir 20 Jahre bag arbeit e.V. - 20 Jahre in denen wir uns aktiv für Integration eingesetzt haben. Und darauf sind wir stolz! Wir wollen das Jubiläum als Anlass nehmen, auf das Erreichte zurückzuschauen und wagen einen Blick in die Zukunft!*

*In dieser Ausgabe von forum arbeit erinnern wir an die Gründung des Verbandes und die Jahre bis 1995. Die Chronologie wird in den kommenden Ausgaben fortgesetzt.*

Die erst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wurden bereits in den achtziger Jahren als Folge der Beschäftigungsprobleme in Westdeutschland gegründet. Sie sollten alternative Beschäftigungsmöglichkeiten für ausgrenzte Gruppen anbieten und im Rahmen eines Konzeptes „Arbeiten und Lernen“ Teilhabe und Integration organisieren.

Viele der Mitarbeiter und Mitarbeiterinnen unserer Unternehmen haben die kompletten letzten 20 Jahre mitgestaltet, einige haben den Bereich gewechselt und neue sind kontinuierlich dazu gekommen, als sich der Sektor fachlich entwickelt hat und zahlenmäßig gewachsen ist. Was damals als Brückenfunktion gedacht war, ist heute fester Bestandteil der Arbeitsmarkt- und Integrationspolitik. Heute sind über 400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in unserem Verband organisiert. Der Verband ist aus den Unternehmen gewachsen und bleibt bis heute ihr Fachverband.

In den vier Ausgaben von forum arbeit in diesem Jahr werden wir Ihnen die Entwicklung des Verbandes in Etappen darstellen. In der heutigen Ausgabe betrachten wir die Ereignisse aus den Jahren 1989 – 1995, welche Themen uns bewegt und welche Lösungsansätze wir präsentiert haben.

### Westdeutschland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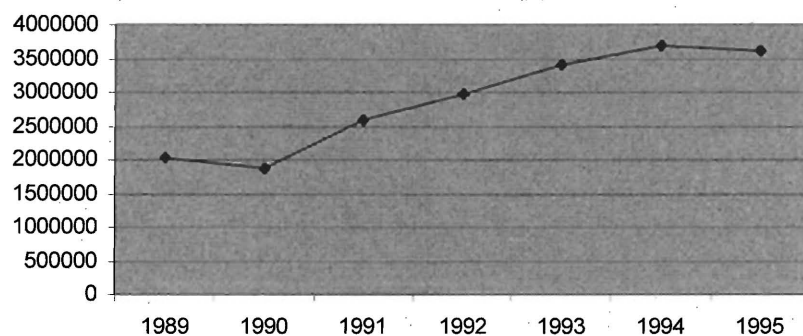
Es lohnt sich am Anfang der Chronik - vielleicht besonders in Anbetracht der heutigen Arbeitsmarktsituation - zuerst an die Rahmenbedingungen von Anfang 1989 zu erinnern. Deutschland war noch in zwei Gesellschaftssysteme geteilt. Das Jahr 1988 schloss mit einer durchschnittlichen Arbeitslosenzahl von 2,2 Millionen Menschen (Quote von 8,7% der Erwerbsbevölkerung) ab. Die Leistungsempfänger/innen in Westdeutschland waren in zwei Systeme eingebunden: Ein versicherungsorganisiertes System mit Empfänger/innen von Arbeitslosengeld und Arbeitslosenhilfe je nach Bezugsdaueranspruch (nach dem Bundes-Arbeitsförderungsgesetz (AFG)) und

ein Fürsorgesystem der Sozialhilfe, für diejenigen ohne Versicherungsansprüche, organisiert auf kommunaler Ebene nach dem Bundes-Sozialhilfe-Gesetz (BSHG).

Die gängigen Aktivierungsinstrumente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nach dem AFG waren ABM (§§ 91-96), der Einarbeitungszuschuss (§ 49 AFG), die Lohnkostenzuschüsse für 50+ („ABM für Ältere“, § 97 AFG) und Lohnkostenzuschüsse für Langzeitarbeitslose, die Förderung der Arbeitsaufnahme von schwer vermittelbaren Menschen (§ 53 AFG) und das Sonder-eingliederungsprogramm nach § 62d AFG (ab Juni 1989). Mit dem Sonderprogramm wurde es erst möglich, im Rahmen des AFG Kombinationen aus Arbeit, Lernen und sozialer Betreuung anzubieten, was sich bis dahin als Mischförderung im Gesetz nur schwer gestalten ließ.

Parallel hierzu wurden den Sozialhilfeempfänger/innen nach §§ 18-20 des BSHG Beschäftigungsangebote im Rahmen der „Arbeit statt Sozialhilfe“ und der „Hilfe zur Arbeit“ Pro-

Anzahl Arbeitslose



Quelle: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gramme bereitgestellt, entweder als sozialrechtliche Arbeitsverhältnisse mit Mehraufwandsentschädigung (ca. 43% der Förderfälle) oder in der arbeitsrechtlichen Variante (ca. 57% der Förderfälle).

Nach einer Umfrage des Deutschen Städtetags gab es in 1989 im Rahmen der Angebote nach BSHG über 110.000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Hiervon dauerten di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in über 77% der Förderfälle länger als 12 Monate und in 17% länger als 24 Monate. In ABM-Stellen arbeiteten damals zusätzlich dazu durchschnittlich ca. 115.000 Menschen. Somit waren allein in Westdeutschland ca. 215.000 Menschen im Rahmen von Angeboten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tätig.

**Gründung**

Am 20. Januar 1989 wurde die erste Satzung der bag arbeit errichtet. Der Verein, mit Sitz in Köln, wurde erstmals am 26. April 1989 ins Vereinsregister eingetr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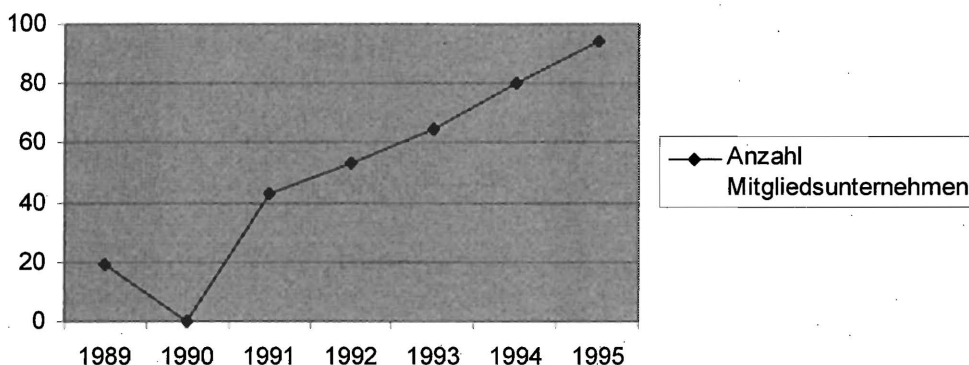
Bereits in 1988 hatten sich die Überlegungen gefestigt, einen Verband zu gründen, als Ort der fachlichen Weiterentwicklung des Bereichs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Obwohl der Arbeitsbereich der geförderten Beschäftigung schon länger existierte und die Gründungsmitglieder bereits langjährige Akteure z.B. in den Wohlfahrtsverbänden waren, gab es bis dahin keine formelle Struktur in Westdeutschland, die mit dem Wissensmanagement für diesen besonderen Ausschnitt der Integrationsarbeit betraut war.

Die Gründungsmitglieder der bag arbeit nahmen dies als Aufforderung, den Aufbau dieses Verbandes auf den Weg zu bringen. Am 20. Januar 1989 war es soweit - 23 Unternehmen kamen in Köln zusammen, um den Verband zu gründen und den ersten fünfköpfigen Vorstand zu wählen. Der Vorstandsvorsitzende der ersten Stunde war Hansjörg Böhlinger, der den Verband in dieser Funktion bis 2007 führte.

Der Zweck des Vereins wurde wie folgt in der ersten Satzung festgelegt und eingetragen: „Der Verein hat den Zweck, die Arbeit der Träger von Einrichtungen und Maßnahmen die im direkt lohnsubventionierten Arbeitsmarkt Arbeits- und Ausbildungsplätze für erwerbslose Menschen zu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n Bedingungen bereitstellen, auf Bundesebene zu fördern, und deren Interessen zu vertreten.“

Über die Jahre, als sich der Arbeitsbereich fachlich weiterentwickelte, wurde der Zweck den Entwicklungen angepasst bis in 1997 die heute noch gültige Fassung festgeschrieben wurde: „Der Verein verfolgt ausschließlich und unmittelbar gemeinnützige bzw. mildtätige Wohlfahrtszwecke im Sinne des Abschnitts »Steuerbegünstigte Zwecke« der Abgabenordnung. Der Verein hat die Förderung der Hilfe für am Arbeitsmarkt besonders benachteiligte Personengruppen, insbesondere die Zielgruppe des § 53 AO, speziell durch soziale Betreuung, berufliche Qualifizierung und sonstige Maßnahmen zur Wiedereingliederung in das Arbeitsleben zum Zweck.“

Anzahl Mitgliedsunternehmen



**Die Gründungsmitglieder:**

- Hansjörg Böhlinger – Neue Arbeit Sindelfingen*
- Achim Meyer auf der Heyde – BBJ Consult*
- Oskar Pfreundschuh – Werkstatt Frankfurt e.V.*
- Axel Biehl – Neue Arbeit Saar*
- Jochen v. Maydell – Hamburger Arbeit Beschäftigungsunternehmen mbH*
- Hans Eckardt – Diakoniewerk Duisburg*
- Albert Wild – Caritasverband für Stuttgart e.V.*
- Winfried Müller – Neue Arbeit Stuttgart*
- Werner Kollmer – GJB Stuttgart*
- Johannes Locher – Neue Arbeit Essen*
- Andreas Knapp – Initiative JAL e.V.*
- Wolfgang Haferkamp – Ruhrwerkstatt e.V.*
- Rolf Schäfer – Förderwerk e.V., Bremen*
- Fritz Brinkmann – Ehrenfelder Verein für Arbeitsbeschaffung*
- Walter Schulz – Zug um Zug Baukooperative*
- Matthias Schulze-Böing – Stadtverwaltung Offenbach*
- Jochen Böger – GOAB mbH, Offenbach*
- Peter Lübbert und Ingo Klapheck – Gewerkschaft gGmbH*
- Walter Ayass – Arbeitsförderungsbetrieb GmbH, Karlsruhe*
- Monika Schulz – Werkhof München gGmbH*
- Claus J. Eggers – Gemeinnützige Arbeits- und Berufsförderungs-ges. mbH, Schuby*
- Wilhelm Barth – Renatec gGmbH*
- Werner Weber – VFG Bonn*

Die ersten Mitgliedsunternehmen der ersten Jahren waren keineswegs homogen - vom kleinen eingetragenen Verein, der ein Dutzend Menschen im Grünbereich beschäftigte, bis zur gemeinnützigen GmbH mit mehreren Hundert Industrie-, Hand-



werks- oder Dienstleistungsarbeitsplätzen. Gemeinsam hatten sie jedoch, dass sie sich eine Reihe von Kompetenzen erworben hatten, über die Betriebe des allgemeinen Arbeitsmarktes in der Regel nicht verfügten.

Die Praxisnähe des Verbands war von Beginn an ein zentrales Anliegen und ist zu unserem Markenzeichen geworden, sei es in unseren Stellungnahmen, in Fachveranstaltungen oder in der Projektarbeit. Diese Praxisnähe zeichnete sich insbesondere in den Strukturen des Verbands ab und in der hohen Bereitschaft der Mitgliedsunternehmen, in Arbeitsgruppen die Verbandsarbeit zu organisieren und durchzuführen und von dort aus den Transfer zu gestalten. Auch nach Gründung einer Geschäftsstelle blieb die fachliche Expertise des Vorstands und der Mitgliedsunternehmen die treibende und entscheidende Kraft für die Aktivitäten und die Kommunikation des Verbands.

In den ersten sechs Verbandsjahren ist die Anzahl der Mitgliedsunternehmen schnell gewachsen von 23 auf 94. Im Jahre 1993 wurde entschieden, den damals bereits 12-köpfigen Vorstand auf 18 Personen zu erweitern, um Vertreter und Vertreterinne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in die Vereinsarbeit einzubinden.

Viele Mitwirkende der Gründungsjahre sind leider nicht mehr aktiv in diesem Bereich tätig. Ein außerordentlicher Dank gilt allen, die den Verband aufgebaut haben und die im Vorstand und seinen Arbeitsgruppen in diesen ersten Jahren mitgewirkt haben.

Seit April 1992 verfügt der Verband über eine Geschäftsstelle in Berlin und beschäftigt selber Mitarbeiter und Mitarbeiterinnen mit dem Transfer der fachlichen Expertise. Die erste Geschäftsführerin war Ellen-Ruth Schneider, die bis zum April 1996 die Geschäftsstelle und deren Aufbau leitete. Unser erstes Büro war damals in der Schönhauser Al-

lee in einem noch nicht vollständig sanierten Altbau. Auf moderne Kommunikationstechnik musste teilweise verzichtet werden, aber das Engagement der damaligen Mitarbeiter/innen machte den Verband funktionsfähig. Der Umzug in die heutigen Räumlichkeiten in der Brunnenstraße erfolgte erst im Jahre 1996. Die Verlegung des Sitzes des Vereins nach Berlin fand 1994 statt.

###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Das Jahr 1989 war für den Verband das Aufbaujahr, in dem es darum ging, die Aufgaben zunächst zu eruieren und zu planen. Keiner konnte damals erahnen, dass am Ende des Jahres Deutschland wiedervereinigt sein würde und somit ein unvorhergesehener Auftrag und große Herausforderungen auf den neu gegründeten Verband zukommen würden - der Transfer von Wissen und Expertise und der Aufbau von Projekten und Beschäftigungsstruktur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2 wurde die bag arbeit vom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im Rahmen eines Großprojektes damit beauftragt, eine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KOW) genau für diesen Transfer aufzubauen. Die vertragliche Regelung zwischen der bag arbeit und dem BMAS sah zwei Aufgabenbereiche vor:

- 1) Förderung des Erfahrungsaustausches von West nach Ost mit dem Ziel, die verantwortlichen Träger und Behörden in den neuen Ländern beim Aufbau geeigneter arbeitsmarktpolitischer Strukturen zu unterstützen.
- 2) Entwicklung und Durchführung von praxisnahen Fortbildungsangeboten für Mitarbeiter und Mitarbeiterinnen von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initiativ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es hieß für die bag arbeit:

- a) die Sammlung und-Evaluation aller für den Erfahrungsaustausch grundlegenden Informationen und Aufbau einer Datenbank mit

Detailinformationen über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initiativen, Förderprogramme, Experten usw.

- b) Vermittlung von Kontakten zu Trägern und Einrichtungen zwecks Praktika und
- c) Organisation des Erfahrungsaustausches in Form von Tagungen und/oder Projektbesuchen.

Das Angebot der KOW war von Anfang an darauf angelegt, keine abstrakte Beratung zu leisten, sondern durch den Verbund von Praktikern einen engen praxisbezogenen Wissenstransfer herzustellen. Zu Beginn organisierte die KOW Tagungen in jedem neuen Bundesland zum Thema „Zukunft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 – Existenzsicherung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mit einem flankierenden Tagungsangebot zu den spezifischen Themen der Organisationsentwicklung wie Planung, Management und Finanzierung. Ansatz war immer die Standortbestimmung und Situationsanalyse von Projekten in den Regionen der neuen Bundesländer zu diskutieren und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der bestehenden Ansätze in Ost und West herauszuarbeiten. Somit sollte vermieden werden, dass der Erfahrungsaustausch auf Modellen und Strukturen basierte, die sich nicht auf die 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übertragen ließ und sollte sich damit von den übrigen und üblichen Beratungsangeboten abheben.

Ebenfalls wurden zahlreiche Fortbildungsangebote im Bereich „Sozialmanagement“ für die Mitarbeiter und Mitarbeiterinnen der Beschäftigungsunternehmen und ABSen entwickelt und aufgelegt. Dies reichte bis hin zu einem Kurs mit 120 Stunden theoretischen Unterrichts und ein Praktikum von 160 Stunden, an dem von 1993 bis 1994 18 leitende Mitarbeiter und Mitarbeiterinnen aus Unternehmen in Brandenburg und Thüringen teilnahmen.

Viele Fortbildungsangebote wurden von den Praktikern aus den Verbandsreihen konzipiert und selber durchgeführt z.B. zu Themen wie „Kommunale Instrumente der Beschäftigungsförderung“, „Anleiter in Beschäftigungsprojekten“, „Das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1994 – Auswirkungen auf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Kommunen“, „No future oder neue Perspektive –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 für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Außerdem wurden neue Arbeitsfelder wie Elektrorecycling, Kulturarbeit und Denkmalpflege vorgestellt sowie Tätigkeitsfelder aus dem Bauhandwerk in Kooperationsformen mit anderen Anbietern aus der allgemeinen Wirtschaft. In den berufsbegleitenden Seminarangeboten waren Managementfragen ebenso wichtig, wie das Thema sozialpädagogische Anleitung. Betriebswirtschaftliche Schwerpunkte standen neben Angeboten zu den arbeitsmarkt- und sozialpolitischen Aufgabenbereichen der Anleiter/innen und des Managements. Auch heute erinnern sich noch zahlreiche Mitgliedsunternehmen gerne an diese Zusammenarbeit in der KOW zurück und an den Wissensgewinn für alle beteiligten Betriebe nicht nur im Ostteil der Republik sondern

auch im Westteil (Reflektion über eigene „alte“ Strukturen). Damals sollte etwas gemeinsam aufgebaut und nicht abgebaut werden.

Ende 1994 wurde die erfolgreiche und anerkannte Arbeit der KOW bis Ende 1997 verlängert und erweitert.

**Jahrestagungen**

Von Anfang an stellten die Jahrestagungen der bag arbeit den jährlichen Höhepunkt im Verbandsleben dar - einerseits wegen der fachlichen Beiträge und der praxisorientierten Workshops und andererseits wegen der Gelegenheiten zum informellen Gespräch und Austausch. Inhalte und Atmosphäre, dies sind die zwei wesentlichen Elemente, die bis heute die Tagung charakterisieren.

1991 fand die erste Jahrestagung zum Thema „Arbeitsmarktpolitik für Benachteiligte – Herausforderungen der 90er Jahre“ in Tutzing statt. 1992 nahmen wir das Thema „Lebensrisiko Arbeitslosigkeit“ auf. In mehreren Themenblöcken wurden die sozialen und individuellen Folgen der Massenarbeitslosigkeit aus wissenschaftlicher, politischer und aus der Sicht der Praktiker diskutiert. Dies schloss auch das Thema der „Sozialbetriebe“ ein und die Auseinandersetzung, ob sie eine endgültige Ausgrenzung der Betroffenen bedeuteten oder die Chance eröffneten, bestimmten Gruppen besser helfen zu können, als dies bisher der Fall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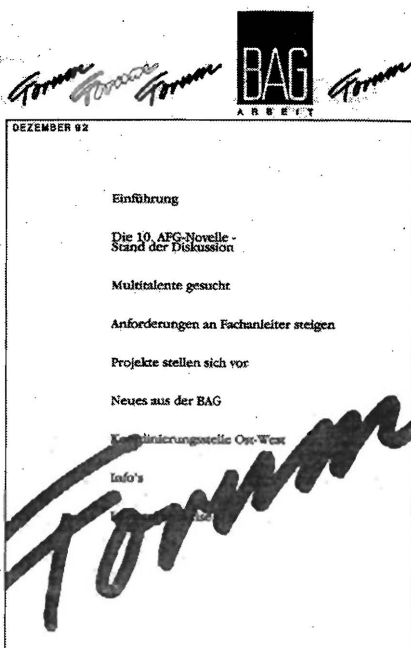
Unter dem Motto „Unternehmen Arbeit. Ideen, Konzepte und Strategien zur Überwindung der Arbeitslosigkeit“ fand 1994 die dritte Jahrestagung statt und nahm das Thema des Endes der Vollbeschäftigung und der Einschätzungen der zukünftigen Entwicklung des Arbeitsmarktes vor. Zum ersten Mal wurden Lösungsansätze und Ideen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in den europäischen Nachbarländern mit Vorträgen aus Frankreich und Dänemark im Rahmen einer Jahrestagung vorgestellt. Ausführungen zu tarifvertraglichen Entlohnungssystemen

in einem so genannten zweiten Arbeitsmarkt und steuerrechtliche Fragen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gesellschaften bildeten weitere Schwerpunkte der zweitägigen Tagung in Tutzing ab.

**forum arbeit**

Die erste Ausgabe von forum arbeit erschien im Dezember 1992, hatte 10 Seiten und startete mit den einleitenden Worten von Hansjörg Böhringer: „Die bag arbeit wird größer und älter; dazu gehört es auch eine Sprache zu finden. Ein Element unter vielen ist hierbei der vorliegende Start von forum arbeit. Eine Möglichkeit wahrzunehmen und sich einzubringen... forum arbeit ist aber nicht irgendein Versuch, sondern unser Versuch. Genauso wie die bag arbeit unsere gemeinsame Aufgabe war und sein wird“.

In der ersten Ausgabe gab es einen Bericht zur 10. Novelle des 1969 ins Leben gerufenen Arbeitsförderungsgesetzes. Damals wurden in der Novelle die nach § 62 a und c geförderten Leistungen Sprachförderung und Eingliederungsgeld als „systemfremde“ Leistungen gestrichen bzw. reduziert. In unserem Kommentar in forum arbeit befürchteten wir: „Hier sind mehr Belastungen für die Sozialhilfe und die Kommunen vorprogrammiert“. ABM sollte von 60.000 auf 40.000 Plätz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reduziert werden und von 400.000 auf 350.000 Plätz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100% Förd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ollte nur noch bei Maßnahmen mit reduzierter Arbeitszeit möglich sein. Maßnahmen zum nachträglichen Erwerb des Hauptschulabschlusses (§ 40b AFG) sollten nicht mehr gefördert werden und Maßnahmen nach § 41a zur beruflichen Orientierung sollten ersatzlos wegfallen. Gleichzeitig sollte die „Umwelt-ABM“ (§ 249 AF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geführt werden. Ein Qualitätserlass des Präsiden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vom 14.07.92 sah das „Verbot“ von „Förderketten“ im FuU-Bereich und



eine stärkere „Einschränkung“ in der Finanzierung der sozialpädagogischen Begleitung in Bildungsmaßnahmen vor. Dies betraf insbesondere Maßnahmekonstruktionen, in denen Orientierungsmaßnahmen und Bildungsmaßnahmen nacheinander geschaltet waren.

Die bag arbeit hat die Novelle damals im forum arbeit als „ein weiterer Schritt zum Ausschluss sozial benachteiligter Personengruppen aus der Arbeitsförderung“ kritisiert. Unter der Überschrift „Multitalent gesucht“ (von Jürgen Schomburg) wurde über die steigenden Anforderungen an Fachanleiter/innen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berichtet und Biotopia in Mannheim (Thomas Weichert) stellte sich als Mitgliedsunternehmen mit seinen Projekten vor.

### Soziale Arbeitsagentur

In 1993 folgten zwei weitere Ausgaben forum arbeit mit den Themen „Arbeitsmarkt und Marketing“, „Brauchen wir besondere Tarife für den 2. Arbeitsmarkt“ und „Gewalt und Jugend“ u.a. Ebenfalls wurden unsere Ideen und Konzepte für eine „Soziale Arbeitsagentur“ mittels forum arbeit transportiert.

Das bag arbeit Konzept der „Sozialen Agentur“ sah eine Entwicklungsperspektive für den Beschäftigungsbetrieb zur Sozialen Arbeitsagentur verzahnt mit Standards fü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jekte vor. „So gilt es, Projekte der Beschäftigung und Qualifizierung nicht als vorübergehende Hilfsaktion zu betrachten, sondern ihnen eine auf Dauer angelegte Rolle zur Stabilisierung der Gesellschaft zuzuerkennen und ihnen damit auch eine auf diese Aufgabe zugeschnittene Ausstattung und Bedeutung zu geben“. Es mahnte die Notwendigkeit an, „soziale und ökologische Aspekte“ in den Betrieben einzuführen und eine Verzahnung von Wirtschafts- und Sozialbetrieb mit einer neuen aktionsfeldorientierten Sicht vorzunehmen. Wir plädierten bereits damals dafür, dass in der Beschäfti-

gungsarbeit „Wirtschaftsförderung, Sozialbereich und Bildungsbereich mitgedacht werden müssen“. Das Konzept einer Sozialen Arbeitsagentur folgte der Vorstellung einer offenen Planung unter Einbeziehung neuer Systembildungen im Gegensatz zu einem Arbeitslosigkeitsmaßnahmeplan. Für uns war damals schon klar, dass eine solche Abbildung der Komplexität nur im regionalen, lokalen Bezug geschehen kann. Die Sozialagentur war unser erstes Großplädoyer für die Regionalisierung der Arbeitsmarktpolitik.

1994 transferierte forum arbeit Gedanken und Thesen zu Themen wie Organisationsentwicklung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und Schuldnerberatung und 1995 wurden Beschäftigungskonzepte aus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wie Frankreich, Spanien, Irland und Österreich vorgestellt.

### Grundsatzpapier „Aufgaben und Ziele von Beschäftigungsunternehmen“ 1994

1993 stand im Zeichen der steigenden Arbeitslosenzahlen. Dem bisherigen Ausbau der Beschäftigungsaktivitäten (auch bedingt durch die Wende) drohte eine Reform mit Einschnitten in die Aktivitäten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Vor dieser Kulisse bekam der Vorstand 1993 den Auftrag, ein Grundsatzpapier zu „Aufgaben und Zielen von Beschäftigungsunternehmen“ für den Verband zu formulieren. Somit sollten erstmals unsere Gesellschaften „ein Gesicht“ für die Öffentlichkeit bekommen und ihre eigene Identität beschreiben.

In der achtseitigen Publikation wurden die Hauptmerkmale und Qualitätsansprüche der Gesellschaften dargestellt, der arbeitsmarktpolitische Handlungsbedarf erklärt, das arbeitsmarktpolitische Angebot aufgezeigt und das Ziel der Integration durch Arbeit und Qualifizierung (Soziale Arbeitsagenturen) definiert. Viele der Grundaussagen behalten ihre Relevanz bis heut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bieten nicht nur Beschäftigung, sondern eine gesellschaftlich relevante Dienstleistung und haben eine den Förderaufwand rechtfertigende Brückenfunktion mit sozialpolitischem, wirtschafts- und arbeitsmarktpolitischem wie kommunalpolitischem Nutzen.“*

Der Anspruch von damals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haben als wesentliches Qualitätsmerkmal eine durchgängige und planvolle Förderung der Beschäftigten. Sie umfasst deren sinnvolle Platzierung bei Eintritt in den Beschäftigungsbetrieb, Angebote beruflicher Qualifizierung, systematisch beratende Begleitung, flankierende soziale Hilfen und den begleiteten Ausstieg aus dem befristeten Arbeitsverhältnis“* trifft auch heute noch zu als Anspruch an die Förderinstrumente.

*„Die Arbeit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oll für den einzelnen sinnstiftenden Charakter haben, das heißt, einen gesellschaftlich anerkannten Nutzen haben und zu nachvollziehbaren Ergebnissen führen.“* Dies gilt als Ziel nach wie vor.

Damals haben wir die Mitarbeit in d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ls Erwerbsarbeit klar definiert.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orientieren sich an der Einsicht, dass Erwerbsarbeit nach wie vor eine Grundvoraussetzung für die Teilnahme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st. Arbeitsverhältnisse i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sind deshalb als Erwerbsarbeit organisiert. Das heißt, sie sind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und werden in der gesellschaftlich üblichen Form entlohnt. In der Regel ist dies eine Bezahlung nach Tarif.“* Hiermit mahnten wir die damals vo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von Arbeitgebergremien geforderten Abstände zu den Entgelt- und Arbeitszeitregelungen des ersten Arbeitsmarktes als *„nicht geeignete Lösungen“* an und plädierten dafür, Sonderregelungen möglichst weitgehend an der Form der Erwerbsarbeit zu orientieren. Wir warnten davor, Einkünfte der

Betroffenen an die Grenze des Existenzminimums zu senken und somit Hilfeetats zusätzlich zu belasten. Das Grundsatzpapier schlug ein und wurde zum großen Erfolg für den Verband und musste mehrmals nachgedruckt werden.

Diese Grundsätze auf den heutigen Erkenntnisstand zu überprüfen und das Papier fortzuschreiben, dies hat sich der jetzige Vorstand im Jubiläumsjahr 2009 vorgenommen. Wir werden unsere Verbandsfeierlichkeiten am Ende des Jahres mit einer Fortsetzung des Grundsatzpapiers abschließen und die nächsten 20 Jahre einleiten!

### **Struktur Erhebung 1993**

1993 wurde beschlossen, eine Strukturhebung in der Mitgliedschaft durchzuführen, um die Arbeits- und Tätigkeitsfelder sowie die Struktur der Unternehmen auszuwerten. 50 Mitgliedsunternehmen nahmen damals an der Erhebung teil. Festgestellt wurde, dass ca. 13.000 Mitarbeiter/innen in diesen 50 Unternehmen mit einer Bandbreite von 2 bis 2.700 Mitarbeiter/innen beschäftigt waren. 32% der Träger hatten bis 50 Beschäftigte, 32% 100 – 300 Beschäftigte, 8% 300 – 500 Beschäftigte, 6% 500 – 1.000 Beschäftigte und 6% mehr als 1.000.

Das Stammkräfteverhältnis ergab folgendes Bild: bei knapp einem Drittel der Mitgliedseinrichtungen lag das Verhältnis von Stammkräften zu Maßnahmebeschäftigten zwischen 10% und 25%. Bei einem weiteren knappen Drittel zwischen 25% und 50%. Damals gab es auch Einrichtungen die ganz ohne Stammkräfte arbeiteten und 18% hatten nur bis zu 5%.

82% der Unternehmen gaben bereits damals sowohl Beschäftigung als auch Qualifizierung als kombiniertes Unternehmensziel an und 66% übernahmen bereits Beratungs- und Betreuungsaufgaben, um die In-

tegrationschancen und Vermittlungsaussichten ihrer Beschäftigten durch individuell zugeschnittene Hilfs- und Betreuungsangebote zu verbessern.

An erster Stelle der Zielgruppen der Maßnahmenbeschäftigten waren die Langzeitarbeitslosen, 68% der Unternehmen gaben auch an, Maßnahmen speziell für Jugendliche anzubieten und 60% für ältere Arbeitnehmer/innen. Mehr als die Hälfte führten spezielle Maßnahmen für Frauen durch und ein Drittel widmeten sich Personen mit besonderen sozialen Schwierigkeiten (z.B. Drogenabhängige, Wohnungslose, Prostituierte usw.).

Insbesondere handwerkliche Tätigkeitsbereiche bildeten die Schwerpunkte der Arbeitsfelder. 62% unserer Mitgliedsunternehmen boten damals Beschäftigungsplätze im Baubereich an (Stadterneuerung, Wohnumfeldgestaltung, Denkmalschutz, Wohnraum-/Haussanierung, Fassadenbegrünung), 34% in der Landschaftspflege und im Gartenbau, 54% im Umweltschutz, 68% im Handwerk (Metallbau, Schlosserei, Tischlerei, Malerei, Lackiererei, Kfz-Werkstatt, Schneiderei, Gas/Wasser/Sanitär), 62% in sozialen Dienstleistungen (hiervon 28% aus dem Küchen- und Kantinenbereich) und 10% in der Landwirtschaft.

Refinanziert wurde die Integrationsarbeit durch das AFG, BSHG, durch Bundesprogramme, EU-Mittel, Eigenerlöse und KJHG. 74% der Mitgliedseinrichtungen griffen auf das AFG als Finanzierungsinstrument zurück, allerdings hatte das AFG nicht die Funktion, wesentliche Stütze der Finanzierung zu sein. Lediglich bei 6% der Einrichtungen lag der Anteil an der Gesamtfinanzierung über 75%. Bei über der Hälfte der Einrichtungen betrug der Finanzierungsanteil durch das AFG weniger oder maximal 50%. 54% der Mitglieder nutzten das Finanzierungsinstrument BSHG. Bei den meisten Einrichtungen lag der

Finanzierungsanteil aus BSHG-Mitteln zwischen 10% und 50%. Bei 8% lag er zwischen 50% und 75% und drei Betriebe gaben an, mehr als 75% der Finanzierung über das BSHG sicherzustellen.

Eine dritte wichtige Säule der Finanzierung war die Förderung aus Mitteln der Europäischen Union. Sie wurde von 58% der Betriebe genutzt, wobei der Anteil bei den meisten Unternehmen noch unter 10% lag.

Eine fü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viel diskutierte Frage betrifft die Bedeutung von Eigenerlösen zur Finanzierung des Unternehmens und der Arbeit. Bei bereits 42% der Unternehmen damals bildeten sie bis zu 25% der Gesamtfinanzierung. Im Bericht wurde seinerzeit der geringe Anteil bedauert!

### **Europa**

In den Jahren 1994 und 1995 orientierte sich der Verband nach Europa und suchte Kontakte zu anderen Verbänden in den EU-Mitgliedsstaaten. Dies mündete bereits 1994 in einen Kooperationsvertrag mit dem Comité Nationale des Enterprises d'Insertion (CNEI) in Frankreich und führte später zur Gründung des Europäischen Netzwerks ENSIE (European Network of Social Integration Enterprises).

Der Kooperationsvertrag beinhaltete die gemeinsame Entwicklung von Lösungsansätzen, die Durchführung von Projekten, die gemeinsame Interessensvertretung in den für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wichtigen Bereichen der europäischen Arbeitsmarktpolitik, die Förderung eines regelmäßigen Austausches und die Förderung der deutsch-französischen Partnerschaft in den Mitgliedseinrichtungen. Der Vertrag wurde in Kehl im September 1994 unterschrieben. Ebenfalls wurde festgelegt, dass die bag arbeit und CNEI ihre Zusammenarbeit auf andere europäische Länder ausdehnen wollten.

## Resümee und Blick auf Teil 2 der Chronologie

1989 – 1995 waren Aufbau- und Entwicklungsjahre, nicht nur für den Verband, sondern auch für viele der Mitgliedsunternehmen und für den Gesamtsektor. Es wurde viel in die Arbeitsmarktförderung investiert, zum ersten Mal begann sich aber die Arbeitslosigkeit in der Bundesrepublik zu verfestigen. Nach den Berechnungen der Westdeutschen Landesbanken in 1994 fehlten unter Berücksichtigung arbeitsmarktpolitischer Maßnahmen einschließlich Frühverrentungen und der „stillen Reserve“ etwa 6,5 Mio. Arbeitsplätze auf dem allgemeinen Arbeitsmarkt zum Erreichen der Vollbeschäftigung. Eine langfristige Prognose der Prognos AG aus dem gleichen Jahr zeigte, dass sich die Zahl der registrierten Arbeitslosen auf hohem Niveau (ca. 3,5 Mio.) verfestigen würde und erst zehn Jahre nach der Jahrtausendwende wieder unter 3 Mio. sinken wird. Auch das Jahresgutachten der „fünf Weisen“ prognostizierte, dass trotz leichter konjunktureller Verbesserung die Situation am Arbeitsmarkt davon nicht profitieren würde, sondern dass die Arbeitslosigkeit eher zunehmen würde.

Fachlich entwickelte sich der Sektor rasant. Der Bund fing an, ordnungspolitisch restriktivere Auflagen in 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e einzufügen und die Anzahl der Förderfälle zu reduzieren. Die Kommunen bauten ihre sozialen Strukturen rund um die Gesellschaften aus und begriffen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als Weg aus der Sozialhilfe. Die Gewerkschaften und Arbeitgeberverbände nahmen zunehmend Notiz von den Aktivitäten des Sektors. Schon damals etablierte sich aber der Gedanke, dass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eine komplexe Aufgabe des Arbeitens, Lernens und der Begleitung ist und dass sie einen lokalen Ansatz hat,

### Die Jahre 1989 - 1995 im Überblick:

**20.01.1989** Gründung, Vorstandsvorsitzender Hansjörg Böhringer

**26.04.1989** Eintragung ins Vereinsregister

**1991** Erste Jahrestagung in Tutzing

**1992** Eröffnung der Geschäftsstelle in Berlin, Start des Projektes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und erste Ausgabe forum arbeit

**1993** Erhebung zur Struktur der Beschäftigungsunternehmen

Positionspapier und Stellungnahmen:

■ bag verurteilt ABM-Kürzungen

■ bag fordert soziale Arbeitsagenturen

■ bag gegen Niedrigtarife im 2. Arbeitsmarkt

■ Stellungnahme zur geplanten Überstellung der Rücklaufmittel des 490-Millionen-Programms an das BMF

**1994** Vereinssitz wird nach Berlin verlegt

Grundsatzpositionen der bag „Aufgaben und Ziele vo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Verlängerungsvertrags KOW bis Ende des Jahres

Veranstaltungsreihe „Kommunale Instrumente der Beschäftigungsförderung“ für das Land Brandenburg

Fortbildung „Sozialpädagogische Betreuung“ für das Land Thüringen

Aufbau europäischer Kontakte – Kooperationsvertrag mit CNEI in Frankreich

**1995** KOW wird bis Ende 97 verlängert

in dessen Kontext die Probleme am besten gelöst werden können.

In der nächsten Ausgabe forum arbeit beschäftigen wir uns mit den Jahren 1996 – 2001: mit der Einführung des SGB III und dem späteren Job-AQTIV-Gesetz sowie mit der Neustrukturierung des Verbands und der Aufnahme der Landesverbände.

Falls Sie Erinnerungen aus den letzten 20 Jahren haben, Fotos oder Schriftstücke besitzen sollten, die Sie an uns weitergeben könnten, würden wir diese gerne im Jubiläumsjahr sammeln und freuen uns über jeden Beitrag. Es wäre schön, das Jahr dafür zu nutzen, ein Zen-

tralarchiv zur Entwicklung d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arbeit anzulegen.

Truda Ann Smith

Geschäftsführerin der bag arbeit

Brunnenstr. 181

10119 Berlin

Tel. 030 / 28 30 58 14

Fax 030 / 28 30 58 20

smith@bagarbeit.de

www.bagarbeit.de



## 20 Jahre bag arbeit - eine Chronologie (Teil 2)

Ein Beitrag von Truda Ann Smith

Im zweiten Teil der Chronologie konzentrieren wir uns auf die Jahre 1996 - 2001. Diese Jahre waren geprägt durch die Reform des AFG, das Inkrafttreten des reformierten SGB III, die Einführung der Vergabe-ABM und des Job-AQTIV-Gesetzes. Für die Verbandsentwicklung brachten die Jahre den Aufbau der Landesverbände, die Gründungen unserer europäischen Netzwerke ENSIE und RREUSE und das Verbandsprojekt „AQTiva“.

### Deutschland Ende 1995

Die zentrale Integrationsarbeit der Mitgliedsunternehmen war weiterhin geregelt durch das AFG und das BSHG. Bundesweit waren 1995 durchschnittlich 3.611.921 Menschen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eine Quote von 9,4%. Durchschnittlich waren ca. 276.000 Menschen in ABM-Stellen beschäftigt (70.000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206.000 in den neuen Bundesländern) mit einem Jahresbudget von ca. 9,4 Mrd. DM (4,7 Mrd. Euro). Zusätzlich zu diesen ABM-Maßnahmen nahmen im gleichen Jahr ca. 616.000 TeilnehmerInnen eine Umschulungsmaßnahme oder eine Fortbildung auf, 71.000 LeistungsbezieherInnen bekamen eine Unterstützung zur Existenzgründung und 199.000 ArbeitnehmerInnen waren in Kurzarbeit. Zusätzlich hierzu wurden schätzungsweise 200.000 Menschen in Angeboten der Städte und Kommunen im Rahmen von BSHG aktiviert.

Nach dem verstärkten Einsatz von ABM in den Jahren 1992 - 1994 mit teilweise über 400.000 Beschäftig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folgte ein Rückgang auf ca. 210.000.

Gleichzeitig stieg die Arbeitslosenquote stetig während die Förderung in vielen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n ebenfalls zurückging.

Auch in den folgenden Jahren ging die Anzahl der Förderfälle weiter zurück und die gezielte Nutzung der Instrumente, um gesellschaftliche Teilhabe besonder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organisieren, wurde eingeschränkt. Wie die steigende Arbeitslosenquote zeigt, war aber der erste Arbeitsmarkt selber nicht in der Lage für viele dieser Arbeitslosen Teilhabe zu organisieren. Die Anzahl prekäre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wuchs Ende der neunziger Jahre und aus der konjunkturellen Arbeitslosigkeit der Rezessionen 1974/75, 1981/82 und 1992/93 entstand eine Sockelarbeitslosigkeit, die zum Teil bedingt durch den Anstieg der Erwerbsbevölkerung ab 1989 dann zur strukturellen Arbeitslosigkeit wurde. Dies drückt sich im stetigen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seit 1973 aus und bestätigt sich zum Teil dadurch, dass in diesem Zeitraum (1973 - 1999) ca. 0,6 Mio. Arbeitsplätze mehr geschaffen als abgebaut w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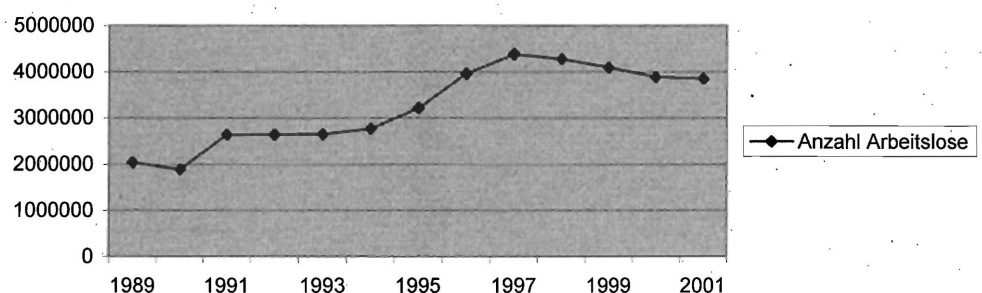
Zwischen 1996 - 2001 gab es neue Hoffnungsträger für die Vermittlungsarbeit: viel Hoffnung wurde auf den neu auszubauenden Bereich „Telearbeit“ gesetzt mit einem damals

geschätzten Beschäftigungspotential von mehr als 1-2 Mio. Arbeitsplätzen. Damals wurde prognostiziert, dass diese neue technologische Möglichkeit den Weg eröffnet für die Beschäftigung zu Hause mit der elektronischen Verbindung ins Unternehmen. Heute sind schätzungsweise über 2 Mio. Menschen an Telearbeitsplätzen beschäftigt. Allerdings sind eine Vielzahl der Arbeitsplätze in speziell hierfür eingerichteten Büros (keine Heimarbeit) oder sie beinhalten die schlichte Einrichtung eines „2. Telearbeitsplatzes“ für Beschäftigte zu Hause, um ihnen die weitere Verarbeitung von Daten von dort aus zu ermöglichen.

Jobrotation war ein weiteres Schlagwort. In den Jahren 1995/1996 erreichte die Jobrotation in Dänemark ihren Höhepunkt als ca. 10% der Arbeitslosen (36.000 Langzeitarbeitslose) mittels Jobrotation vermittelt wurden. Mit dem Förderprogramm ADAPT wurden bundesweit viele Modelle in den Jahren 1996 - 2000 erprobt und mit dem Job-AQTIV-Gesetz wurde Jobrotation 2001 sogar im SGB III fest verankert.

Mit der verbreiteten Nutzung des Internets und der IT-Technologie wurden ab 1998 neue Medienberufe/Informationstechnische Berufe als Ausbildungsberufe anerkannt. Diese bildeten eine Vielzahl der Umschu-

Anzahl Arbeitslose





lungs- und Bildungsmaßnahmen insbesondere für ältere Facharbeiter. Mit den IT-Entwicklungen wuchs ebenfalls die Anzahl der Callcenter. Die ersten Callcenter gab es bereits in den 80er Jahren, heute sind über 435.000 Menschen in dieser Branche tätig.

### **Reform des AFG, Eingliederung des AFG in das SGB III**

1996 legte die damalige Regierung den Gesetzesentwurf zur Reformierung des Arbeitsförderungsgesetzes (AFRG) in ein SGB III vor. Hierzu wurde die bag arbeit als Sachverständige zur Anhörung des Bundestagsausschusses am 23.09.96 eingeladen. Als positiv haben wir die Einrichtung eines neuen Experimentiertopfs, die Entstehung von Eingliederungsplänen, die Verbesserungen für Existenzgründer, die Übertragung von Haushaltsresten auf das Folgejahr und die Übernahme von Kinderbetreuungskosten bei FuU bewertet.

Kritisiert haben wir u.a., dass das politische Ziel eines hohen Beschäftigungsgrades aufgegeben, dass strukturell bedingte Arbeitslosigkeit durch Verschlechterung der Bedingungen für Arbeitslose bekämpft, dass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stark vernachlässigt wird und wir haben vorausgesagt, dass sich dadurch die 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ramatisch verschlechtern wird. Bedauert haben wir ebenfalls, dass mit dem neuen Gesetz eine Ausweitung des Verständnisses von sozialer Verantwortung für ausgegrenzte Personen nur insoweit gestellt wurde, als im Wesentlichen die versicherungsrechtlichen Ansprüche erfüllt wurden. Aus unserer Sicht orientierte sich die Zielsetzung der Reform fast ausschließlich an der Regelung des Verhältnisses zu den Arbeitslosen auf der Grundlage des Versichertenprinzips.

Wir schätzten ein, dass das Selbstverwaltungsprinzip der damaligen Bundesanstalt für Arbeit und die Position der Landesarbeitsämter geschwächt werden sollten, was wir kritisch beäugten. Wir forderten die Politik auf, strukturpolitische Zielsetzungen in das neue Gesetz aufzunehmen.

Die Regelungen und Rahmenbedingungen für ABM wurden mit dem Gesetz eingeschränkt. Kurzzeitig wurde sogar eine gesonderte ultima ratio für Vergabe-ABM im Garten- und Landschaftsbau eingeführt. Die Vergabe-ABM regelte, dass Arbeiten in diesem Sektor nur an Unternehmen im Rahmen ihres jeweiligen Geschäftszweckes mit der Absicht der Gewinnerzielung bzw. an Wirtschaftsunternehmen vergeben werden können. In Eigenregie konnte ein Träger erst dann Maßnahmen durchführen „wenn zuvor alle Möglichkeiten einer Vergabe an ein Wirtschaftsunternehmen geprüft wurden“. In der Regel hieß dies die Unbedenklichkeitsregelung. In der Realität wurden die hierfür reservierten Mittel dann nicht ausgeschöpft, da die Wirtschaftsbetriebe zwar die Aufträge, jedoch nicht die Integrationsarbeit verwirklichen konnten.

Ab April 1997 wurden ABM in ein Instrument für die Zielgruppe Langzeitarbeitslose umgestellt mit der Entscheidung, dass künftig nur noch 5% der ABM-Mittel in einem Haushaltsjahr für nicht langzeitarbeitslose BezieherInnen eingesetzt werden dürfen. Der Zuschuss wurde auf 80% des förderungsfähigen Arbeitsentgelts gesenkt und die Entgeltobergrenze nach unten gesetzt.

Die Eingliederungszuschüsse (Zusammenfassung der alten Regelungen für Einarbeitungszuschuss, Eingliederungsbeihilfe, Eingliederungshilfe und Lohnkostenzuschuss für Ältere) und der Einstellungszuschuss bei Neugründungen wurden im Rahmen des Reformprozesses bereits zum 01.04.97 neu eingeführt. Trainingsmaßnahmen (§§ 48 bis 52) wurden in die Förderung aufgenommen mit der Zielsetzung, die Eignung für eine berufliche Tätigkeit oder eine Leistung der aktiven Arbeitsförderung festzustellen sowie Unterstützung in der Vermittlung zu ermöglichen. Vor der Reform konnten Lohnkostenzuschüsse für ältere Arbeitnehmer ab 50 Jahre bis zu acht Jahren bewilligt werden (75% der Kosten danach degressiv), nach dem neuen Gesetz wurde dies in einen Eingliederungs-

zuschuss für die Dauer von 24 Monaten umgewandelt.

Im Laufe des Reformprozesses (1996-1998) wurden eine Vielzahl der Eckpfeiler der heutigen Arbeitsmarktförderung sukzessive eingeführt. Sie mündeten dann in das AFRG-Gesetz und somit ins SGB III, das zum 01.01.98 in Kraft trat. Mit dem neuen Gesetz wurde ein einziger Eingliederungstitel für den Bereich SGB III geschaffen, der erstmalig fast alle Instrumente umfasste. Die Aufteilung der Mittel sollte dann neuerdings in den Arbeitsämtern erfolgen. Hierfür sollten die Ämter jährliche Eingliederungsbilanzen erstellen, die Aufschluss über den Mitteleinsatz, die geförderten Personen und die Wirksamkeit geben.

### **1999 – Eine neue Regierung und die große SGB-III-Reform**

Mit der von der neuen rot-grünen Regierung angekündigten großen Reform des SGB III sah der Vorstand der bag arbeit eine große Chance - angesichts eines hohen Sockels an Langzeitarbeitslosigkeit, anhaltender und strukturell bedingter Massenarbeitslosigkeit und besonders prekärer Arbeitsmarktstruktur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das Instrumentarium der Arbeitsmarktpolitik auf den Prüfstand zu stellen. Hierzu berief er eine Arbeitsgruppe zur Erarbeitung von Thesen und Leitlinien für den Verband, die sich im Wesentlichen auf beschäftigungsfördernde und qualifizierende Ansätze konzentrierten. Auf Grund der guten Resonanz wurde im zweiten Schritt eine Expertenkommission einberufen, die im Jahr 2000 unser „Memorandum zur SGB-III-Reform“ veröffentlichte.

### **Job-AQTIV-Gesetz – Fordern und Fördern**

Mit dem neuen Gesetz wurden zentrale Ziele wie die Vermeidung von Langzeitarbeitslosigkeit, Förderung der individuellen Beschäftigungsfähigkeit, Förderung einer präventiven Arbeitsmarktpolitik,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Förderung der Gleichstellung von Männern und Frauen auf dem Arbeitsmarkt und Unterstützung de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in den Mittelpunkt gestellt.

Die Arbeitsmarktpolitik sollte unterwertiger Beschäftigung entgegenwirken und eine Weiterentwicklung der regionalen Beschäftigungs- und Infrastrukturförderung sollte gefordert werden. Die Arbeitsmarktpolitik sollte flexibler werden und Folgendes wurde u.a. neu geregelt bzw. übernommen im Gesetz: Einführung Jobrotation, Übernahme des Jugend-Sofort-Programms, AQJ-Programme, Benachteiligtenförderung für Jugendliche mit der Einführung der Vermittlungsprämien, Erleichterungen im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Verleihzeit von 12 auf 24 Monate verlängert), Einführung der Meldepflicht bei drohender Arbeitslosigkeit, Einführung von Kinderbetreuungskosten bei Qualifizierungsmaßnahmen, Eingliederungsvereinbarung, Möglichkeit der Beauftragung Dritter mit der Vermittlung und die Einführung der Beschäftigung schaffenden Infrastrukturförderung. Die bisher gültigen Wartezeiten wurden abgeschafft und es wurde mehr Konzentration auf die sofortige Intervention bei Eintritt in die Arbeitslosigkeit gelegt. Allerdings wurde eine neue Wartezeit von drei Jahren nach der Förderung durch ABM durchgesetzt. Die pauschalierte Förderung wurde für ABM eingeführt, erzielte Einnahmen des Trägers sollten aber nicht mehr angerechnet werden, die Quote der Nicht-LeistungsempfängerInnen in ABM wurde von 5% auf 10% erhöht und die BerufsrückkehrerInnen sollten künftig gefördert werden. Die wissenschaftliche Evaluierung und Wirkungsforschung wurde zum ersten Mal verpflichtend im Gesetz festgeschrieben.

Im Jahre 2001 erschien der Entwurf für das Job-AQTIV-Gesetz (aktivieren, qualifizieren, trainieren, investieren, vermitteln). Erneut wurden wir zur parlamentarischen Anhörung eingeladen und plädierten für eine größere Verbindlichkeit von Personalentwicklung und Qualifizierung. Es dürfe keine Maßnahmen geben argumentierten wir, in denen diese beiden Komponenten nicht vorgeschrieben sind. Wir schlugen Vermittlungsprä-

mien in beschäftigungsfördernden Instrumenten vor, die Zusammenlegung von ABM und SAM und eine neue Definition von Zusätzlichkeit, die die Zusätzlichkeit der Beschäftigung und nicht der zu verrichtenden Arbeit zur Fördervoraussetzung macht. Im Rahmen der Diskussionen um die Reform veröffentlichten wir unser AQTiva-Papier, ein Diskussionspapier zur Neuausrichtung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und unterbreiteten folgende Argumente und Vorschläge für eine neue Einordnung und Umsetzung:

*„1. Zukünftig müssen Effektivitäts- und Effizienzkriterien bei der Gew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eine stärkere Relevanz erhalten. Unterschiedliche Instrumente stehen auf Grund ihrer Wirkungen und des Verhältnisses von Kosten und Nutzen in einer Hierarchie zueinander. Auf Zugang zu diesen Instrumenten besteht unabhängig von zuvor zurückgelegten Versicherungszeiten oder der Dauer der Arbeitslosigkeit ein Rechtsanspruch – die Wahl des konkreten Instrumentes ist Ergebnis der Beratung und Bedarfsfeststellung.*

*2.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ist für die Personen, für die eine unmittelbare Beschäftigung auf dem Arbeitsmarkt (noch) nicht erreichbar ist, bei denen also die vorrangigen Instrumente wie Beratung, Vermittlung, Weiterbildung oder anreizende Zuschüsse nicht greifen, ein geeignetes Instrument, um die Chance auf eine spätere Erwerbsarbeit zu wahren.*

*3. Zielsetzung dieses Instrumentes ist die Förderung oder der Erhalt der Beschäftigungsfähigkeit. Dabei ist die Integration in den Arbeitsmarkt jederzeit handlungsleitend.*

*4. AQTiva eröffnet flexible Interventionsmöglichkeiten. Die detaillierte Ausgestaltung der Intervention wird je nach Arbeitsmarktlage, Struktur der Arbeitslosigkeit sowie mit Blick auf strukturpolitische Notwendigkeiten auf regionaler Ebene vorgenommen. Dabei sind die im Folgenden beschriebenen Qualitätsmerkmale einzuhalten; sie werden in einem Qualitätsleitfaden AQTiva festgeschrieben.*

*5. Entwicklungspläne, die auf einem vorgeschalteten Profiling-/Assessmentverfahren basieren, sind unabdingbare Voraussetzung eines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und werden in seinem Verlauf regelmäßig fortgeschrieben. Sie werden im Sinne des Empowerments gemeinsam mit der/dem Beschäftigten entwickelt und sind für Arbeitsverwaltung, Arbeitgeber, eingeschaltete Dienstleister sowie geförderte Beschäftigte selbst verbindlich.*

*6. Aus dem individuellen Entwicklungsplan sowie ggf. strukturpolitischen Bedarfen ergibt sich die Dauer der geförderten Beschäftigung; sie ist grundsätzlich befristet. Sie wird mindestens jährlich überprüft und erforderlichenfalls verlängert. Eine maximale Förderungsdauer wird nicht festgelegt. Soweit eine vorzeitige Zielerreichung gemäß des Entwicklungsplans (z.B. Vermittlung in den Arbeitsmarkt) erfolgt, läuft die Dauer der Finanzierung (ausschließlich der Lohnsubventionierung) bis zum Ende der Förderzeit.*

*7. AQTiva beinhaltet regelhaft eine angemessene Qualifizierung, Kompetenzvermittlung und Personalentwicklung. Sie haben sich an den Anforderungen des Arbeitsmarktes auszurichten und betriebs- und branchenübergreifend verwertbare Qualifikationen zu vermitteln. Neben der fachlichen und elementaren Bildung sind insbesondere die mit dem Erwerb von Arbeitserfahrungen korrelierenden Schlüsselqualifikationen sowie Praktika in Betrieben zu fördern. Passgenaue Arbeitsvermittlung ist integrierter Bestandteil öffentlich geförderter Beschäftigung.*

*8. Es werden qualifizierte Beschäftigungsfelder angeboten werden, deren Anforderungsprofil denen des Arbeitsmarktes nahe kommen soll.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ermöglicht sinnstiftende Arbeit verbunden mit öffentlichem Nutzen z.B. im Umweltschutz, bei personenbezogenen und sozialen Dienstleistungen sowie bei der Verbesserung der lokalen Infra- und Verkehrsstrukturen. Dabei sind die Arbeitsfelder nicht auf diese Bereiche beschränkt und müs-*

sen auch nicht zwangsläufig gemeinnützig sein.

9. AQtiva kann sowohl bei arbeitsmarktpolitischen Dienstleistern als auch in sonstigen Betrieben des Arbeitsmarktes angesiedelt sein. Dabei werden die gleichen beschriebenen Qualitätsmerkmale zu Grunde gelegt und ihre Einhaltung überprüft. Kooperation zwischen den arbeitsmarktpolitischen Dienstleistern und Betrieben wird angestrebt und gefördert. An die Stelle der generellen Zusätzlichkeit bestimmter Aufgaben tritt die Zusätzlichkeit der Beschäftigung. Der Vergabevorrang wird aufgrund gleicher Bewerbungsvoraussetzungen abgeschafft.

10. Zur Vermeidung von Mitnahme-Effekten wird vor der Bewilligung von AQtiva grundsätzlich eine MitarbeiterInnenstatistik und -bilanz der vorangegangenen fünf Jahre vorausgesetzt. Längerfristig geförderte Beschäftigung kann darüber hinaus nur bei arbeitsmarktpolitischen Dienstleistern erfolgen.

11. Das Entgelt in AQtiva muss erkennbar über den passiven Transferleistungen bei Arbeitslosigkeit liegen und zugleich Anreize bieten, die Übergänge in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zu suchen.

12. AQtiva-Beschäftigte werden durch einen pauschalierten Lohnkostenzuschuss gefördert. Die weiteren erforderlichen Lohnkosten müssen von den jeweiligen Arbeitgebern am Markt, durch die Einwerbung von Drittmitteln sowie aus Rücklagen finanziert werden. Dies setzt voraus, dass erwirtschaftete Überschüsse nicht mit der Förderung verrechnet werden.

13. In der Festlegung der Höhe der pauschalen Lohnkostenzuschüsse für AQtiva ist – neben den Sozialpartnern – die Interessenvertre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Dienstleister zu beteiligen.

14. Zwischen den öffentlichen Auftraggebern und den durchführenden Unternehmen werden Leistungsvereinbarungen bzw. Förderverträge abgeschlossen, die neben der quantitativen und qualitativen Ausgestaltung die Förderung von Regiekraften,

Arbeitsmitteln/-materialien und notwendiger Verwaltung sicherstellen. Regiekraften haben eine Schlüsselfunktion bei der Umsetz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Zielsetzung – ihre Aufgabe kann in der Regel nicht durch geförderte Beschäftigte wahrgenommen werden.

15. Ziele und Erfolgskriterien der individuellen Intervention und beim Einsatz des Instrumentes sind jeweils festzulegen und zu vereinbaren. Dazu zählen die Vermittlung in den Arbeitsmarkt, der Erwerb von beruflichen bzw. allgemeinbildenden Qualifizierungselementen (Abschlüsse, Teilabschlüsse, Module), die Wiederherstellung bzw. der Ausbau der Beschäftigungsfähigkeit (Employability, insbesondere Softskills) sowie die Befähigung zum arbeitsweltbezogenen Selbstmanagement (Empowerment, Selbstvermarktung, produktiver Umgang mit Brüchen in der Erwerbsbiografie etc.) und die Förderung sozialer Kompetenz und persönlicher Stabilisierung.

16. Effektivität und Effizienz des Instruments müssen überprüfbar sein. Controlling, Monitoring sowie Evaluierung sind verbindliche Bestandteile.

Das Gesetz Job:AQTIV wurde im Herbst 2001 verabschiedet und trat zum 01.01.2002 in Kraft. Kaum acht Wochen später, am 22.02.2002 wurde die Hartz-Kommission einberufen.

###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KOW)**

1999 endete das Verbandsprojek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In den sieben Jahren KOW konnten zahlreiche Schulungen, Fortbildungen, Fachtagungen und Workshops angeboten werden, so dass über 5.000 TeilnehmerInnen unterstützt werden konnten. Zusätzlich hierzu fanden über 100 Einzelberatungen vor Ort bei den Projekten statt. Alle beschäftigungsrelevanten Themen konnten aufgegriffen werden – von der sozialpädagogischen Betreuung, über Anleiterschulungen bis hin zu Managementfunktionen und betriebswirtschaftlichem Controlling.

Durch unsere Aktivitäten in dem erfolgreichen Projekt war es möglich, Kontakte zu vielfältigen Akteuren gerad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ufzubauen und somit etablierte sich die Koordinierungsstelle als relevanter Schnittpunkt im Netzwerk der Arbeitsmarktakteure. Sie half das Fachwissen zu bündeln und ermöglichte vielen kleinen Beschäftigungsinitiativen sich zu etablieren. Durch die Koordinierungsstelle wurden viele Kooperationen aufgebaut und wir nutzten die Zeit, unsere bestehenden Methoden und Strukturen kritisch zu überprüfen. Eine einmalige Aufbau-Stimmung herrschte im Sektor, die wir gezielt für den Erfahrungsaustausch und die Transferarbeit nutzten. Diese Bündelung von Know-How setzte viel Innovations- und Kreativitätspotential in der Integrationsarbeit fr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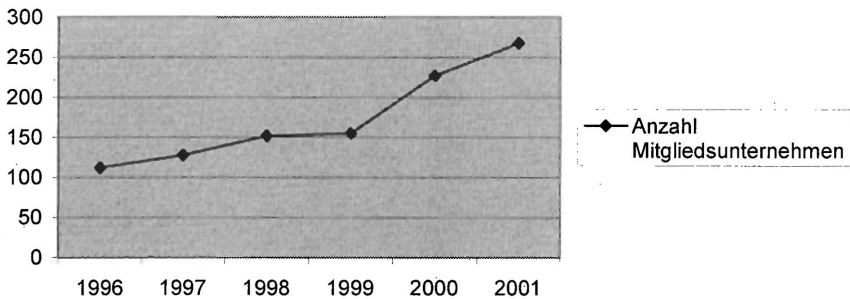
### **Landesverbände und Mitgliederwachstum**

Bis 1996 war die bag arbeit ausschließlich auf Bundesebene organisiert. Landesverbände und Landesarbeitsgemeinschaften (LAG) waren zu diesem Zeitpunkt regionale Einheiten, in denen unsere Mitgliedsunternehmen ebenfalls rege aktiv waren, aber mit denen wir ohne unmittelbare Bindung zum Bundesverband kooperiert haben. Dort haben die bag-Mitgliedsunternehmen parallel ihre regionalen Konzepte einbringen und entwickeln können.

1996 nahmen wir die Debatte auf wie diese parallelen Strukturen verbindlicher miteinander arbeiten könnten. Auf Grund einiger Mitgliedsanträge von LAG wurde beschlossen, diese in die bag arbeit aufzunehmen. Im gleichen Jahr wurden entsprechend Landesverbände und -arbeitsgemeinschaften aus Berlin, Baden-Württemberg und Bremen aufgenommen.

Im Jahre 1997 wurde die Möglichkeit, eigene Landesverbände innerhalb der bag arbeit zu gründen, offiziell in die Satzung aufgenommen und zwar als organisatorische Einheit der bag arbeit, bestehend aus mindestens 5 Mitgliedsunternehmen. 1997 und 1998 wurden dann Landesvertretungen in Berlin, Hamburg, Nordrhein-Westfalen, Sachsen, Thüringen,

Anzahl Mitgliedsunternehmen



Baden-Württemberg, Schleswig-Holstein und Bayern gebildet.

Die Vermeidung von Doppel-Strukturen und Doppelbelastungen der Unternehmen wurde zum zentralen Thema in den folgenden Jahren und in 2001 wurde beschlossen, auch andere Landesverbände mit ihren Mitgliedsunternehmen als Mitglied in den Verband aufzunehmen. Dieser Schritt diente der Absicherung aller Strukturen und führte dazu, dass die regionalen Vertretungen gestärkt und ausgebaut werden konnten.

In dem Zeitraum 1996 - 2001 wuchs die Anzahl der Mitgliedsunternehmen gewaltig.

### Europa ganz nah!

Bereits 1994 hatte die bag arbeit begonnen Kontakte zu anderen Beschäftigungs-Netzwerken in den europäischen Nachbarstaaten aufzubauen. Ein Kooperationsvertrag wurde bereits 1994 mit Frankreich geschlossen und es folgte 1997 die erste Jahrestagung der bag arbeit zu europäischen Themen „Zukunft - Arbeit - Europa - Anforderungen einer zukunftsorientierten Arbeitsmarktpolitik unter Einbeziehung europäischer Erfahrungen“. Hierzu wurden Referenten aus der Schweiz, aus Österreich und den Niederlanden eingeladen, um ihre Positionen zu den aktuellen Herausforderungen bei de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vor dem Hintergrund des 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es darzustellen.

1998 konnte das erste europäische Projekt starten „Beschäftigung und Drittes System“. Ziel des Projektes war der Aufbau eines nationalen Netzwerkes im Bereich Gebrauchsgüterhandel mit einer sozialen Komponente, die Koordination eines

transnationalen Netzwerkes sowie der Erfahrungsaustausch mit der Gruppe ENVIE aus Frankreich und die Zusammenführung der beiden Netzwerke in einer europäischen Vernetzung. Das nationale Netzwerk hatte zum Projektabschluss bereits 62 Mitglieder, die bis heute in unserer Fachgruppe Arbeit und Umwelt rege aktiv sind. Auf europäischer Ebene konnte das Netzwerk RREUSE gegründet werden, das heute Mitgliedsnetzwerke aus zehn europäischen Ländern vereinigt.

Mit der Gründung dieses nationalen und transnationalen Netzwerkes konnte an der Frage der Qualitätsstandards und an den sozialen Komponenten in der Recyclingbranche und im Gebrauchsgüterhandel gezielt gearbeitet werden. Der Dialog über die WEEE-Richtlini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zur Reduktion der zunehmenden Menge an Elektronikschrott) und die nationalen Richtlinien wurde aufgenommen, mit der Zielsetzung die Bedingungen in den Beschäftigungsunternehmen in den öffentlichen Diskussionen zu beleuchten und ihre Belange in die Gesetzgebung einzubringen.

Ebenfalls konnte am 10.03.2001 ein zweites europäisches Netzwerk durch uns gegründet werden – das europäische Netzwerk der Beschäftigungsverbände, ENSIE (European Network of Social Integration Enterprises). Zu den Gründungsmitgliedern gehörten Verbände aus den Ländern Belgien (Wallonie und Flandern), Frankreich, Deutschland, Spanien und Österreich. Die Vorbereitungen erstreckten sich über mehr als zwei Jahre und stellten sich für alle Beteiligten viel komplexer dar als vorgestellt. Allein die Auseinandersetzungen über ar-

### Unser Leitbild - 1999 verabschiedet

Wir sind der Zusammenschluss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in Deutschland. Wir wollen, dass jeder Mensch zur selbstbestimmten Teilhabe an der Gesellschaft die Chance auf Arbeit und Bildung erhält.

Das Hauptziel der bag arbeit ist die Interessenvertretung der Verbandsmitglieder gegenüber Politik, Wirtschaft, Verwaltung, Gewerkschaften, Verbänden und Wissenschaft.

#### Aufgaben der bag arbeit:

- Mitwirkung an der Gestaltung der Arbeitsmarktpolitik und Einflussnahme auf ihre gesetzlichen Grundlagen und Rahmenbedingungen;
- Wirksame Vermittlung arbeitsmarktpolitischer Themen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Medien;
- Kontinuierliche Kommunikation innerhalb des Verbands;
- Unternehmensberatung sowie Entwicklung und Sicherung von Qualitätsstandards für Mitgliedsorganisationen.

beitsmarktpolitische Strategien vor dem Hintergrund der Heterogenität der Bedingungen in den einzelnen Ländern erforderten viel Sensibilität. Diese Unterschiede wurden deutlich in der Betrachtung, wie geförderte Beschäftigung in den Mitgliedsstaaten ordnungspolitisch organisiert wird und welchen Stellenwert und welche Rolle sie im Wirtschaftsgeschehen hat, woher die Initiative hauptsächlich stammte (kommunal, kooperative Bewegung, gewerkschaftlich organisiert, privates Engagement, Solidaritätsbewegung, Armutsbekämpfung) und welche Zielsetzung die Beschäftigung verfolgte (temporär oder dauerhaft) und für welche Zielgruppen. Hinzu kamen die Feinheiten der einzelnen nationalen Legislaturen! Bis zur Gründungserklärung wurde lebhaft

und vehement über selbstbestimmte Teilhabe, MitarbeiterInnen-Partizipation, Bildungsaufträge und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diskutiert sowie die Rolle der Beschäftigung im wirtschaftlichen und Integrations-Kontext! In den darauffolgenden sechs Jahren halfen diese Gründungsdebatten, um weitere Netzwerke aus UK, Italien, Portugal und Irland dazu zu gewinnen – die harte Gründungsarbeit hat sich gelohnt.

## Die Jahrestagungen

In den Jahren 1996 - 2001 gewann unsere Jahrestagung zunehmend an Bedeutung und an TeilnehmerInnen. 1996 in Hofgeismar beschäftigten wir uns mit knapp 100 Gästen mit „Qualitätssicherung und Innovation - Zukunftschancen von Beschäftigungs-, Qualifizierungs- und Vermittlungsgesellschaften“. 1997 ging es nach Berlin, wo mehr als 100 Gäste über „Anforderungen einer zukunftsorientierten Arbeitsmarktpolitik unter Einbeziehung europäischer Erfahrungen“ diskutierten. In Frankfurt am Main nahmen 130 Gäste die Chance wahr, sich über „Neue Beschäftigung im Dritten System - Zwischen Staat und Markt“ zu informieren. Im Zeichen der Reform des SGB III wurde 1999 und 2000 in Berlin und Köln mit über 140 Gästen „Die Krise der Erwerbsarbeit und ein Neues arbeitsmarktpolitisches Leitbild in Deutschland“ erörtert. Die Jahrestagung in Dresden 2001 stand im Zeichen des Eckpunktepapiers zum Job-AQTIV-Gesetz. 150 Gäste diskutierten über die These „Jede Menge Arbeit, jede Menge Arbeitslosigkeit“.

## Resümee

1996 - 2001 waren Jahre der arbeitsmarktpolitischen Reformen. Insgesamt zwei neue Ausrichtungen wurden mit der Reform des AFG und der Einführung ins SGB III im Jahre 1998 und mit dem Job-AQTIV-Gesetz im Jahre 2001 eingeführt. Die Rahmenbedingungen für die Umsetzung pendelten jeweils zwischen größerer Flexibilisierung, dem Fördern und Fordern des Einzelnen und dem Aufbau neuer Strukturen und Steuerungsmechanismen vor Ort. Die Zielsetzung musste sich auf eine

## Die Jahre 1996 - 2001 im Überblick

- 1996** bag arbeit nimmt Stellung zur geplanten AFG-Reform  
bag arbeit ist Sachverständige bei der Anhörung in Bonn  
Umzug in die Brunnenstraße 181  
Axel Biehl wird Geschäftsführer
- 1997** Gründung verbandseigener Landesverbände  
Positionspapier zum Problemfeld AnleiterInnen i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wird bis 1999 verlängert
- 1998** Gründung der Fachgruppe Gebrauchtwagen und Recycling  
Stellungnahme zur Vergabe-ABM  
Arbeitsgruppe Leitbild gegründet
- 1999** 10 Jahre bag arbeit  
Erarbeitung von Mindeststandards für den Anleiterberuf  
Stellungnahme zur Jugendarbeitslosigkeit  
Begleitung eines arbeitsmarktpolitischen Frauenprojektes in China  
Neues Design, neues Logo in grün/blau im Dezember eingeführt  
Koordinierungsstelle Ost-West endet  
Leitbild eingeführt  
Neue Geschäftsführerin Katja Barloschky
- 2000** ExpertInnengruppe gebildet und Veröffentlichung des Memorandums: Thesen und Leitlinien zum SGB III  
Internet-Präsenz geht ins Netz
- 2001** Veröffentlichung des bag-Papiers AQTiva - Diskussionspapier zur Neuausrichtung öffentlich geförderter Beschäftigung  
bag arbeit ist Sachverständige zum Job-AQTIV-Gesetz  
Verbandsumstrukturierung – Aufnahme assoziierter Landesverbände  
ENSIE und RREUSE gegründet  
Neue Geschäftsführerin Truda Ann Smith

neue strukturelle Arbeitslosigkeit umstellen, der allein durch die Arbeitsmarktpolitik nicht entgegengewirkt werden konnte. Bereits in 2001 gab es Überlegungen zur Zusammenführung der Sozialhilfe und Arbeitslosenhilfe.

Der Verband wuchs weiter und änderte seine Strukturen, um die regionalen Vertretungen zu stärken und Doppelstrukturen im Sektor zu vermeiden. Unsere Rolle als kompetenter Partner der Politik, Wissenschaft und anderer Verbände und Gewerkschaften nahm zu und somit die Vielfalt von Aufgaben im Verband. Die Gründung europäischer Netzwerke

half uns eigene Strukturen und Systemen zu überprüfen und forderte uns neue gemeinsame Ziele im europäischen Kontext zu formulieren.

In der nächsten Ausgabe forum arbeit beschäftigen wir uns mit den Jahren 2002 - 2005, mit der Hartz-Kommission, der Zusammenlegung der Sozialhilfe und Arbeitslosenhilfe (SGB II) und der wachsenden Arbeit im Verband.

Truda Ann Smith  
bag arbeit e.V.  
Tel. 030 / 28 30 58 11  
smith@bagarbeit.de  
www.bagarbeit.de



## 20 Jahre bag arbeit - eine Chronologie (Teil 3)

Ein Beitrag von Truda Ann Smith

Im dritten Teil der Chronologie konzentrieren wir uns auf die Jahre 2002-2004, mit der Berufung der Hartz-Kommission, der Zusammenlegung der Sozialhilfe und Arbeitslosenhilfe (SGB II) und mit den wachsenden Aufgaben im Verband.

### Deutschland Ende 2001

Bei 9,4% lag die Arbeitslosenquote Ende 2001. Sie war zwar leicht rückgängig aber weiterhin auf dem gleichen hohen Niveau wie seit Mitte der 80er Jahre. Die strukturelle Arbeitslosigkeit verfestigte sich. Bundesweit waren im Jahresdurchschnitt 3.852.564 Menschen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Die Anzahl der Menschen in Eingliederungsmaßnahmen wie ABM, Weiterbildung, SAM, Trainingsmaß-

Teilnehmer/innen nahmen an einer Umschulungsmaßnahme, einer Fortbildung oder Trainingsmaßnahme teil. 122.942 Arbeitnehmer/innen waren in Kurzarbeit. Darüber hinaus wurden schätzungsweise 400.000 Menschen in Angeboten der Städte und Kommunen im Rahmen des BSHG aktivi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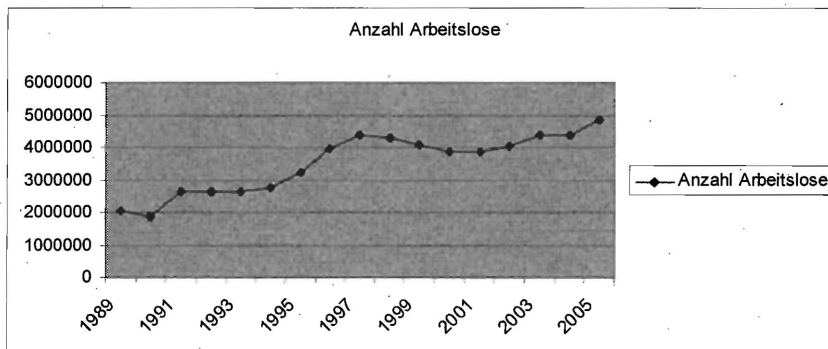
Die gesetzlichen Rahmenbedingungen für Eingliederung hatte der Deutsche Bundestag mit dem Ende 2001 verabschiedeten Job-Aktiv-Gesetz neu geordnet. Ziel war die Arbeitsmarktpolitik flexibler zu gestalten, Aktivierung und Qualifizierung in den Mittelpunkt zu stellen, unterwertiger Beschäftigung entgegenzuwirken und die Weiterentwicklung der regionalen Beschäftigungs- und Infrastrukturförderung voranzutreiben.

### Die „Hartz“-Reformjahre – der Auslö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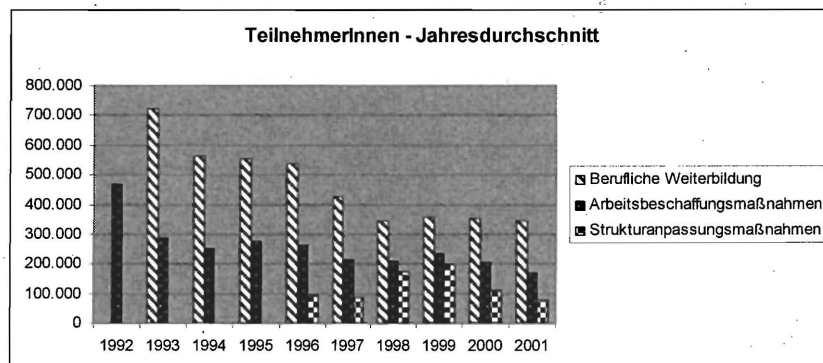
Am 04.02.2002 veröffentlichte die damalige Bundesanstalt für Arbeit eine Pressemitteilung zu einem Vorab-Prüfbericht des Bundesrechnungshofs. Während einer Stichprobe von fünf Arbeitsämtern in 2001 hatte der BRH festgestellt, dass 70% der angegebenen Vermittlungen fehlerhaft gebucht waren. Diese Pressemitteilung kündigte an, dass die Bundesanstalt die Fälle sowie die Buchungsmöglichkeiten der Vermittler/innen überprüfen wird. Weiterhin wurde berichtet, dass der Bundesrechnungshof weitere 20 Arbeitsämter bis April überprüfen wolle.

Am 06.02.02 wurde die Arbeitslosenstatistik für Januar veröffentlicht - im Jahresvergleich gab es im Januar den größten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seit Dezember 1997. Die Arbeitslosenquote stieg bundesweit auf 10,4%. In Ostdeutschland lag sie bei 19,1% und bei 8,3% im Westen. Diese Zunahme konzentrierte sich laut Bericht der Bundesanstalt auch neuerdings auf die alten Bundesländer.

Am 07.02.02 berichtete die Bundesanstalt für Arbeit, dass sie die Arbeitsämter künftig stärker kon-



nahmen war im Vergleich zu den frühen 90er Jahren rückläufig: in 2001 waren durchschnittlich 166.643 Menschen in ABM beschäftigt (50.619 in den alten und 116.024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sätzlich zu diesen ABM-Stellen waren im gleichen Jahr 76.466 Menschen in SAM beschäftigt (10.699 in den alten und 65.767 in den neuen Bundesländern). 449.622



trollieren wird und dass der BA-Vorstand ein Sofortprogramm beschlossen hat, mit dem die gesamte Organisation der BA auf den Prüfstand gestellt werden soll. Hierbei sollten die Ablauforganisation überprüft sowie Verbesserungsvorschläge für die Vermittlungsarbeit erarbeitet werden. Der Vorstand beabsichtigte eine Arbeitsgruppe zu bilden mit Vertreter/innen der Arbeitnehmer- und Arbeitgeberverbände, der öffentlichen Hand und mit externen Sachverständigen. Am 15.02.02 legte der BA-Vorstand dem damaligen Bundesarbeitsminister, Walter Riester, einen entsprechenden Maßnahmenkatalog vor. Am 20.02.02 tagte der Bundestags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 zum „Vermittlungsskandal“. Am 21.02.02 trat BA-Präsident Bernd Jagoda zurück. Florian Gerster, Sozialminister in Rheinland-Pfalz, wurde am 22.02.02 als sein Nachfolger ins Amt berufen.

Ebenfalls am 22.02.02 wurde vom damaligen Bundeskanzler, Gerhard Schröder, die Kommission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sog. Hartz-Kommission) unter Leitung von Dr. Peter Hartz eingesetzt. Ihre Aufgabe war bis zum Ende der Legislaturperiode (Sommer 2002) ein Konzept zu erstellen, das in drei konzeptionelle Teile gegliedert war: 1) ein Konzept für den zukünftigen Aufgabenzuschnitt der BA (Konzentration auf die Kernaufgaben mit einer Gewichtung der Aufgaben zugunsten der operativen Dienstleistungen Vermittlung und Beratung) 2) ein Konzept für die neue Organisationsstruktur (Umbau zu einem modernen Dienstleister mit mehr Verantwortlichkeit und Entscheidungsfreude vor Ort, mit stärkerer Regionalisierung und Dezentralisierung einschl. Vorschlägen für Organisationsmodelle für die Zusammenlegung der Arbeitslosenhilfe und Sozialhilfe) und 3) ein Konzept für die Durchführung (dieses sollte zeigen „wie die Überführung der bisherigen Arbeitsverwaltung in eine neue Organisationsstruktur so friktionsfrei wie möglich erfolgen“ könnte).

Im März 2002 beriet der Bundestag und Bundesrat über das Eilgesetz von Bundesminister Riester zur Reform der Arbeitsvermittlung, das Folgendes neu regelte:

- Das Amt des Präsidenten und Vize-Präsidenten der Bundesanstalt wurde abgeschafft, künftig sollte die Leitung durch einen dreiköpfigen Vorstand erfolgen.
- Der Verwaltungsrat wurde verkleinert und sollte sich künftig zu gleichen Teilen aus Vertretern der Arbeitnehmer- und Arbeitgeberverbände und die Gebietskörperschaften zusammensetzen.
- Die Erlaubnispflicht für private Arbeitsvermittler wurde abgeschafft. Jedem Arbeitslosen wurde das Recht eingeräumt, nach dreimonatiger Arbeitslosigkeit einen privaten Arbeitsvermittler beauftragen zu dürfen. Die Honorare/Vermittlungsgutscheine wurden begrenzt auf 1.500 Euro bei drei Monaten Arbeitslosigkeit, auf 2.000 Euro bei sechs Monaten und auf 2.500 Euro bei einer Arbeitslosigkeit ab 9 Monaten.

### 13 Innovationsmodule

Der Bericht der Kommission wurde im Juli 2002 das erste Mal in der Öffentlichkeit präsentiert und lag am 16. August komplett vor. Er beinhaltete 13 Innovationsmodule (siehe Kästchen rechts). Das Bundeskabinett beschloss am 22. August davon 15 Eckpunkte zur Umsetzung der Vorschläge herauszunehmen: eingeführt werden sollten PersonalServiceAgenturen, Ich-AG und JobFloater (stellt ein KMU nach Ablauf der Probezeit einen Arbeitslosen dauerhaft ein, erhält das Unternehmen eine Option auf ein Finanzierungspaket in Form eines Darlehens) und Beschäftigung in privaten Haushalten sollte gefördert werden. Unternehmen sollten Anreize bekommen, durch „prämierte Beschäftigungssteigerung“ (z.B. Vergünstigungen bei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Beschäftigungsbilanzen zu veröffentlichen, JobCenter

sollten flächendeckend eingeführt, das Leistungsrecht vereinfacht und die Meldepflicht bei Kündigung eingeführt werden. Die Kinderbetreuung sollte ausgebaut und die Beweislast bei Sanktionen umgekehrt werden. Einerseits sollte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 von jungen Menschen gefördert und andererseits ein BridgeSystem eingeführt werden, nach dem ältere Arbeitslose ab 55 Jahren auf eigenen Wunsch aus der Betreuung der JobCenter herausgenommen werden und eine kostenneutrale monatliche Zahlung erhalten konnten, um mit 60 vorzeitige Rente in Anspruch zu nehmen. Die Instrumente der Arbeitsförderung sollten vereinfacht und der Wettbewerb gestärkt werden, die BA sollte ein effektiveres Controlling bekommen und Sozialhilfe und Arbeitslosenhilfe zusammengelegt werden. Die 15 Eckpunkte sollten in zwei Stufen erfolgen: in gesetzgeberischen Verfahren und per Sofortmaßnahmen.

### 13 Innovationsmodule

1. Doppelter Kundenauftrag: Arbeitssuchende und Arbeitgeber – Verbesserter Service für Kunden – JobCenter
2. Familienfreundliche Vermittlung und Erhöhung der Geschwindigkeit in der Vermittlung
3. Neue Zumutbarkeit und Freiwilligkeit
4. Jugendliche Arbeitslose – Ausbildungszeit-Wertpapier
5. Förderung älterer Arbeitnehmer und „BridgeSystem“
6. Zusammenführung von Arbeitslosenhilfe und Sozialhilfe
7. Kein Nachschub für Nürnberg! Beschäftigungsbilanz – Bonussystem für Unternehmen
8. Aufbau von PersonalServiceAgenturen (PSA) – Betriebsnahe Weiterbildung – Integration schwer Vermittelbarer

9. Neue Beschäftigung und Abbau von Schwarzarbeit durch „Ich-AG“ und „Familien-AG“ mit vollwertiger Versicherung – Mini-Jobs mit Pauschalabgabe und Abzugsfähigkeit von privaten Dienstleistungen
10. Personal – Transparentes Controlling – Effiziente IT-Unterstützung aller Prozesse – Aufbauorganisation – Selbstverwaltung – Arbeitsmarktforschung – Change Management
11. Umbau der Landesarbeitsämter zu KompetenzCentern für neue Arbeitsplätze und Beschäftigungsentwicklung – Start mit den neuen Bundesländern
12. Finanzierung der Maßnahmen zum Abbau der Arbeitslosigkeit
13. Masterplan – Beitrag der Profis der Nation

Das Echo auf die Kommission und ihre Vorschläge war durchaus konstruktiv und positiv. Alle wollten mitarbeiten und jeder konnte Elemente der 13 Innovationsmodule unterstützen. Auch die bag arbeit stand den Vorschlägen der Hartz-Kommission zunächst positiv gegenüber. Wir wurden von der Kommission im Mai 2002 als Sachverständige zum Bereich Beschäftigungsmaßnahmen angehört. Aufbauend auf ihren Vorschlägen sahen wir aber die Notwendigkeit, die Zielgruppen der Arbeitslosen näher zu definieren und diese passenden Instrumenten zuzuordnen.

### **Gesetze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I & II**

Bereits im November 2002 wurden die Gesetzesvorlagen für die ersten beiden Reformgesetze beraten. In dem ersten Gesetz ging es um die Einführung von Bildungsgutscheinen und die Förderung beruflicher Weiterbildung, die Zertifizierung von Weiterbildung, den Aufbau von

PersonalServiceAgenturen (PSA), den Anspruch auf private Vermittlung, die Meldepflicht bei Kündigung, Mobilitätshilfen z.B. zinslose Darlehen und Umzugshilfe bei Beschäftigungsaufnahme und um neue Sperrzeiten. Arbeitslosengeld und -hilfe wurden von der bisherigen Anpassung an die Entwicklung des Lohnniveaus abgekoppelt.

Die Möglichkeit der Leistungszahlung im Bereich der Vermittlung in der BA wurde eingeführt. Paragraph 421i SGB III - Beauftragung von Trägern mit Eingliederungsmaßnahmen - wurde kreiert. Eine Entgeltssicherung für ältere Arbeitnehmer/innen (Zuschuss zum Entgelt, Befreiung des Arbeitgebers von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bei Neueinstellungen ab 55 Jahre) wurde ebenfalls eingeführt. Im zweiten Gesetz ging es um die Einführung der Ich-AG, der Mini- und Midi-Jobs und um die Einrichtung von JobCentern als zentrale Anlaufzentren.

Zur konkreten Umsetzung von PSA haben wir Vorschläge eingebracht und dafür plädiert die Gesetzesvorlage so auszurichten, dass dort unterschiedliche Aufgabenprofile und Zielgruppen berücksichtigt werden können und die PSA nicht nur in marktwirtschaftliche Unternehmensformen zu zwingen.

### **Gesetze III & IV: Zusammenlegung Arbeitslosenhilfe und Sozialhilfe – das SGB II**

Im September 2003 erschienen die ersten Entwürfe für die zweite Stufe des Gesetzgebungsverfahrens. Das dritte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sollte die Reform der Bundesanstalt in einer neuen Organisationsstruktur (Bundesagentur) regeln sowie neue Steuerungsinstrumente (Zielvereinbarungen) einführen, ABM und SAM zusammenlegen, Leistungsrecht vereinfachen, Altersteilzeit weiterentwickeln und Transferinstrumente der Arbeitsförderung schärfen und attraktiver gestalten. Das vierte Gesetz sollte die bestehenden Systeme der Arbeitslosenhilfe und Sozialhilfe zusammenführen und diese in einem

einheitlichen Leistungsgesetz auf Bundesebene in der Trägerschaft der Bundesagentur für alle hilfebedürftigen erwerbsfähigen Menschen regeln - im SGB II.

Im Oktober 2003 haben wir als Sachverständige bei der parlamentarischen Anhörung zum vierten Gesetz zu drei zentralen Problemen im Entwurf Stellung genommen. Zur Definition der Erwerbsfähigkeit forderten wir die rentenrechtliche Definition festzuschreiben, die neuen JobCenter sahen wir als nur funktionsfähig, wenn sie in eigener Rechtsträgerschaft (z.B. als GmbH) in gleichberechtigter Partnerschaft zwischen der Agentur für Arbeit und der Kommune sowie eventuell Dritten geführt werden. Die AGH-MAE wurden aus der BSHG-Rechtsprechung übernommen, AGH-Entgelt jedoch nicht. Hier haben wir auf die Notwendigkeit hingewiesen auch marktnahe Beschäftigung im Gesetz sicherzustellen und AGH-Entgelt ebenfalls in das neue SGB II zu übernehmen. In der dritten Lesung wurde das Gesetz dahingehend verändert, dass die Definition der Erwerbslosigkeit nicht wie vorgesehen per Ministerverordnung geändert werden konnte und AGH-Entgelt nach § 19 BSHG wurde neu eingeführt.

Obwohl der Bundestag beide Gesetze letztendlich mit diesen Änderungen verabschiedete, musste im Dezember 2003 der Vermittlungsausschuss zwischen Bundestag und Bundesrat einberufen werden. Ausschlaggebend waren die konträren Positionen zur Frage der Trägerschaft und der Organisation der Zusammenarbeit vor Ort. Als Kompromiss wurden die ARGE und die Optionskommune ins Leben gerufen. SGB II sollte nun zum 01.01.2005 in Kraft treten.

2004 stand im Zeichen des noch nicht verabschiedeten „Optionsgesetzes“ und der Vorbereitung vor Ort auf eine ARGE-Lösung. Für den in letzter Minute im Vermittlungsverfahren erreichten Kompromiss musste noch der gesetzliche Rahmen für



die optierenden Kommunen vom Parlament festgelegt werden, bevor sich die Kommunen auf die 69 Optionsplätze bewerben konnten. Dies hatte zur Folge, dass die Planungsunsicherheit für alle Akteure noch bis Sommer 2004 anhielt und vielerorts erst im Herbst ernsthafte Strukturen zur Umsetzung aufgebaut werden konnten. Vor diesem Hintergrund war es ab Herbst 2004 eine zentrale Forderung der bag arbeit, Übergangsregelungen zu schaffen zur Absicherung von Integrationsleistungen für Langzeitarbeitslose für die ersten sechs Monate in 2005. Hierzu konnten wir die Entscheidungsträger überzeugen und im Juni 2004 wurde eine Übergangsverordnung verabschiedet, die den Kommunen weiterhin ihre Beschäftigungsprogramme bis in das Jahr 2005 hinein ermöglichte, ohne dass die neuen ARGEn bereits gegründet waren. Dies bedeutete, dass vielen Beschäftigten und Langzeitarbeitslosen wieder Perspektiven angeboten werden konnten und entschärfte den drohenden Kollaps der Eingliederungsstrukturen vor Ort.

In der Anhörung zum Optionsgesetz setzten wir uns zur Sicherstellung von effektiven und erfolgreichen Aktivierungsmaßnahmen vor Ort für die regionale Verankerung von Arbeitsmarktpolitik ein und für die Stärkung der Entscheidungskompetenz und das strategische Handeln dort. Hierzu war uns damals bereits bewusst, dass die ARGEn und Kommunen in eigener Verantwortung handeln müssen. Zum einen war unsere Empfehlung die ARGE in eigener Rechtsform zu gründen und zum anderen drückten wir unsere Sorge aus über die sogenannten „Globalen Budgets“, die ohne klare Aufgabentrennung die Leistungen für Eingliederung, Vermittlung und Verwaltung zusammenfassten. Der Gesetzgeber sah vor, dass den Aufgabenträgern mehr Flexibilität in der Handhabung der Mittel gegeben wird und sie nach regionaler Bedarfslage den Aufgabenschwerpunkt bei den Vermittlungsfachkräften oder bei den Eingliederungs-

leistungen bilden können. Obwohl diese Möglichkeit des regionalen Handelns zu begrüßen war, merkten wir an dieser Stelle an, dass abgesichert werden musste, dass ausreichend Mittel für alle Aktivierungsangebote nach § 16 bereitgestellt werden. Ebenfalls äußerten wir uns zu den Integrationsquoten und plädierten für eine regionale Verteilung der Mittel, die die Komplexität des dortigen Arbeitsmarkts widerspiegelt.

Schwerpunkte unserer Umsetzungsgespräche mit der Bundesagentur, der Fachöffentlichkeit und den politischen Entscheidungsträgern waren:

- Übergangsregelung (Übergangsverordnung/Finanzierung, ABM, Sonderprogramme)
- Ausschreibung (Zentraleinkauf, Geltungsbereich SGB II § 16)
- Ausgestaltung § 16 Absatz 3 (Marktbeteiligung, Drittmittel, Fallmanagement)
- ARGE (Rechtsform, eigenständige Organisationseinheit)

Wir formulierten unsere Vision für eine erfolgreiche Umsetzung von Integration wie folgt: Zur Erfolgsabsicherung der neuen Eingliederungsleistungen und zur Erreichung der politischen Zielvorgaben ist es notwendig, dass:

- die Entscheidungskompetenz und Handlungsbefugnis vor Ort bei den neuen Aufgabenträgern fest verankert wird
-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in Form von ABM, sozialrechtlicher Arbeit und arbeitsrechtlicher Vertragsarbeit gleichrangig nebeneinander besteht
- passive und aktive Leistungen deckungsfähig sind
-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sinnstiftend, qualifizierend und integrativ wirken kann
- Fallmanager/innen Entscheidungs- und Handlungsbefugnis einschließlich Budgetverwaltung haben

- die Betriebe im Konsens mit der örtlichen Wirtschaft marktnah agieren können
- die neuen Aufgabenträger mit ihren arbeitsmarktpolitischen Dienstleistern real verhandeln können
-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Planungssicherheit bekommen.

Innerhalb von drei Jahren wurden die Instrumentenausrichtung, die Strukturen vor Ort und die Leistungsgewährung für Langzeitarbeitslose und Sozialhilfeempfänger/innen komplett neu geordnet.

## Neue Projektarbeit bei der bag arbeit

In den Jahren 2002-2004 führten wir fünf neue Förderprojekte im Verband durch zu vier Kernthemen unserer Arbeit – Qualität, Kompetenzentwicklung, Lernen sowie demographischer Wandel.

## Kooperation statt Konkurrenz

Mit einer Förderung des BMAS führten wir das ESF-Projekt „Kooperation statt Konkurrenz“ durch. Es umfasste vier inhaltlich und methodisch unterschiedliche Teilprojekte:

- *Modul 1* hatte die Entwicklung von wirtschaftsnahen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n zum Ziel. Die Kooperationspartner entwickelten differenzierte Ansätze, um benachteiligten Zielgruppen den Einstieg in den ersten Arbeitsmarkt zu erleichtern und die aufnehmenden Wirtschaftsunternehmen und andere Arbeitgeber bei der Integration der neuen Beschäftigten zu unterstützen.

- Eine differenzierte Verbleibsevaluation von Teilnehmer/innen an ABM und SAM wurde in *Modul 2* durchgeführt. Mit Hilfe eines Call-Centers wurden rund 700 Teilnehmer/innen zu Beginn, am Ende und sechs bis zwölf Monate nach Maßnahme-Ende befragt, um eine Einschätzung der Maßnahmen und

die erzielten Effekte aus Sicht der Kund/innen zu eruieren.

■ In *Modul 3* wurde die erste bundesweit angelegte Datenbank zur Erfassung und Abbild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frastruktur erarbeitet. Über das Internet konnte jedes arbeitsmarktpolitische Unternehmen wesentliche Eckdaten und Schwerpunkte seiner Tätigkeit eingeben, diese bei Bedarf ergänzen und eigene Referenzprojekte vorstellen.

■ Die unternehmensspezifische Entwicklung eines Qualitätsmanagementsystems durch und für arbeitsmarktpolitische Dienstleister war Ziel von *Modul 4*. Im Verlauf des Projektzeitraumes entwickelten und erprobten zehn Unternehmen eigene QM-Ansätze, bereiteten sich auf eine Zertifizierung nach DIN ISO 9001:2000 vor und erarbeiteten ein Handbuch und Internetportal.

Die zentralen Aktivitäten der einzelnen Module boten viele Möglichkeiten des bundesweiten fachlichen Austauschs im Rahmen von Fachtagungen, Workshops und Fachforen. Für den Verband entstanden mehrere wertvolle Produkte. Das sehr geschätzte Qualitätsmanagement-Handbuch wurde im Projektverlauf gemeinsam mit zehn Verbandsmitgliedern und Dr. Gerald Graubner entwickelt. Ebenfalls wurde eine QM-Internet-Plattform geschaffen, die u.a. Grundlagenwissen, Hinweise zu QM-Veranstaltungen der bag arbeit und viele Musterformulare zum Downloaden enthält.

Die Verbleibsevaluation aus Modul 2 bewies, dass positive, entwicklungsfördernde Effekte arbeitsmarktpolitischer Maßnahmen zu verzeichnen sind jenseits der Indikatoren der reinen Vermittlung. Sie zeigte, dass sich bei den befragten Teilnehmer/innen an ABM und SAM durch die arbeitsweltbezogene Integration eine Stabilisierung der Persönlichkeit, ein positives Lebensgefühl mit einem verbesserten Gesundheitsempfinden und Aktivierungseffekte bereits während und nicht nur nach Abschluss

der Maßnahme ergaben. Bezogen auf die berufliche Wiedereingliederung konnte gezeigt werden, dass ABM und SAM einen hohen berufsbezogenen Aktivierungseffekt haben und dass Integrationschancen im Zeitverlauf auch noch sechs bis zwölf Monate nach Maßnahmeenende sichtbar werden. Die Erhebung machte darüber hinaus deutlich, dass d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aus Sicht der Teilnehmenden eine zentrale Funktion bei Orientierung, Beratung und Unterstützung zukommt – und dies weit über die Zeit der Maßnahmenteilnahme hinaus.

Neben diesen positiven Wirkungen zeigte die Verlaufsanalyse auch, dass durch erneute Arbeitslosigkeit nach der Beendigung der Maßnahme enttäuschte Erwartungshaltungen entstehen können, die sich in abnehmendem Aktivierungspotenzial, negativerer gesundheitlicher Befindlichkeit und fehlender Stabilisierung ausdrücken. Insgesamt, so die Ergebnisse dieser Untersuchung, ließ sich eine positive Bilanz der Verbleibsevaluation ziehen: Neben der direkten Wiedereingliederung in den Arbeitsmarkt existieren weitere mittel- und langfristig wirkende Erfolgsfaktoren und die zwischenzeitliche Integration ins Berufsleben verhindert eine nachhaltige Ausgrenzung und sorgt dafür, dass der Kontakt zum Arbeitsleben erhalten bleibt. Hier zu nennen ist, dass bei der Job-Aktiv-Reform genau dieser Erhalt der Beschäftigungsfähigkeit als Indikator für ABM aufgenommen wurde.

Mit der Datenbank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frastruktur stand allen arbeitsmarktpolitischen Dienstleistern ein neues Medium zur Verfügung, mit dem sie ihr Leistungsspektrum und die Palette ihrer Integrationsangebote bundesweit präsentieren konnten. Die Datenbank wurde gemeinsam mit der prosozial gmbh entwickelt. Leider hat die Nutzung der Plattform unsere Erwartungen nicht erfüllen können, hierzu haben sicherlich die Verunsicherungen und Umstellungen im

Zuge der Einführung des SGB II das Vorhaben sowohl im Projektverlauf als auch in der Umsetzung erschwert.

### Second Chance

In 2002 startete auch unser erstes EQUAL-Projekt „Second Chance“ (2002-2005). Das Projekt sah vor, Betriebe des dritten Sektors auf die Veränderungen und neuen Verordnungen im Gebrauchtwarenhandel und in der Abfallwirtschaft vorzubereiten und sie in Anbieterverbände und Netzwerke mit der allgemeinen Wirtschaft einzubinden. Hierzu gehörten u.a. Aktivitäten im Bereich Qualitätsmanagement, Qualitätssicherung, Qualifizierung, Marketing und Logistik. Das Projekt bestand aus sechs Teilprojekten, welche ihre Ursprünge in Mitgliedsunternehmen unserer Fachgruppe Gebrauchtwaren hatten. „Second Chance“ wurde zu einem wichtigen Projekt für die Entwicklung der Fachgruppe, die sich gleichzeitig in 2002 neu aufstellte.

Im Projekt sind viele Produkte entwickelt worden, die auch heute in den Unternehmen der Fachgruppe genutzt und weiterentwickelt werden, so z.B. der Recycling-Trainer (die Multimedia-Selbstlern-Software zum Thema „Sammlung und Behandlung von Elektro-Altgeräten“), die Lernkarten für Recycling-Werker, das Qualifizierungshandbuch des Recycling-Netzwerks Süd, der Foliensatz Basiswissen für Grundschulungen und Ersteinweisungen in Elektro-Altgeräte-Entsorgungsbetrieben, die Dokumentation Verkaufshelfer/in Second Hand, Deutsch am Arbeitsplatz, die Dokumentation und Methodik zur praxisbezogenen Erlernung der deutschen Sprache am Arbeitsplatz für Migrant/innen, teilnehmerbezogene Qualifizierungskonzepte, das Qualitätsmanagement-Handbuch Second Hand, Betriebshandbuch Second Hand Kaufhaus, das Warenwirtschaftssystem ECUS, die Marketingkonzeption Second Chance Ost sowie das Qualitäts- und Trainingshandbuch Möbel.

**Lernkultur Kompetenzentwicklung**

Mit dem Projekt „Lernkultur Kompetenzentwicklung“ haben wir gemeinsam mit den Partnern neue Ansätze zur Entwicklung und Nutzung von Innovationspotenzialen Älterer erprobt. Die bag arbeit führte und koordinierte im Auftrag der Arbeitsgemeinschaft Betriebliche Weiterbildungsforschung (ABWF) ein Vorhaben im Rahmen des Forschungsprogramms Lernkultur Kompetenzentwicklung des bmb+f. Bei Anschluss an die bestehenden Fördermöglichkeiten für ältere Arbeitslos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urden in drei Unternehmen Entwicklung, Aufbau und Umsetzung von Kompetenzentwicklungsprojekten älterer Arbeitsloser aus der Tätigkeit arbeitsmarktpolitischer Dienstleister heraus gestaltet und wissenschaftlich begleitet. Inhaltlich ging es in dem Vorhaben darum, aus der Spezifik der Unternehmen und ihrer regionalen Einbindung heraus unter Nutzung der einzubringenden Interessen, Ideen und Potenziale der Menschen

- einen ganzheitlichen Ansatz der Arbeits- und Lebensgestaltung,
- Arbeits- und Unterstützungsstrukturen für selbstbestimmtes und selbstorganisiertes Lernen,
- Entwicklung von Sinnkompetenz über Erwerbsarbeit hinaus und zur Bewältigung von Übergangs-, Wechsel- und Krisensituationen zu führen und zu bewerten.

Praktisch wurden so Übergänge aus Formen der Erwerbsarbeit zunehmend in Formen unterstützten freiwilligen Engagements und ggf. zurück in neue bisher nicht erschlossene Tätigkeitsbereiche und Formen von Erwerbs- und Gemeinwesenarbeit selbstbestimmt gestaltet.

**Hoffnung Alter**

Aufbauend auf diesem Projekt entstand das Vorhaben „Hoffnung Alter“ (gefördert durch das Land Brandenburg). Das Projekt nahm

seine Arbeit in 2004 auf mit dem Ziel, innovative Ansätze für eine altersgerechte Personalpolitik in der Pflege unter verstärkter Beteiligung älterer Fachkräfte zu entwickeln und sie transferierbar zu machen. Die Aufgabe der bag arbeit lag in dem Vorhaben darin, die zu entwickelnden Beispiellösungen (Best Practice) für eine altersgerechte Personalgewinnung und Personalentwicklung zu begleiten, Ansätze in Veranstaltungen, Erfahrungsaustauschen, Workshops und Publikationen zu verifizieren und zu präsentieren und damit Angebote für einen (bundesweiten) Transfer von Instrumenten, Strukturen, Gestaltungsansätzen und Erfahrungen für eine Vielzahl arbeitsmarktpolitischer Dienstleister zur Gestaltung ihrer Integrationsaktivitäten in Abhängigkeit des jeweiligen regionalen Rahmens zu entwickeln.

**Lernort Beschäftigungsunterneh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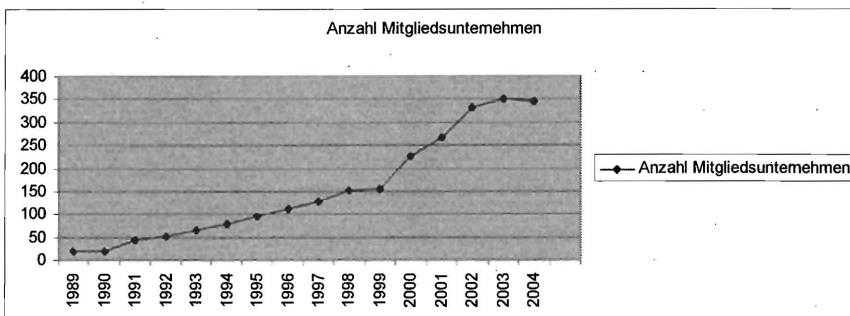
Von 2002 - 2004 führten wir ebenfalls das Projekt „Lernort Beschäftigungsunternehmen“ durch, gefördert durch das BMBF. Der Modellversuch nutzte die besonderen Bedingungen, Möglichkeiten und Potenziale von regional etablierten Beschäftigungsunternehmen und entwickelte Modelle betrieblicher Weiterbildung – abgestimmt auf den Bedarf des jeweiligen regionalen Markts. Das Projekt zielte auf die systematische Entwicklung, Erprobung und praktische Prüfung von Instrumenten und Vorgehensweisen, mit denen es gelingt, der mangelnden gesellschaftlichen Integration benachteiligter Personengruppen ent-

gegenzuwirken und die integrative Aneignung von Kompetenzen, zur Chance und schließlich zu einem Wettbewerbsvorteil auf dem regionalen Arbeitsmarkt zu machen. Der Modellversuch gestaltete in unmittelbarem Zusammenwirken mit anderen Wirtschaftsunternehmen der Region

- Lernen durch Arbeit am Produkt und in den Beziehungen zu Kunden;
- Lernen durch Arbeit an sozialen Beziehungen;
- Lernen durch Arbeits- und Unterstützungsstrukturen;
- Lernen durch Arbeitsorganisation;
- Lernen im sozialen Umfeld

**Landesverbände und Mitgliederwachstum**

Zwischen 2002 und 2004 ist der Verband weiterhin gewachsen. Waren es Ende 2001 257 Mitgliedsunternehmen stieg ihre Zahl bis Ende 2004 auf 345. Dies ermöglichte uns neue Wege des bundesweiten fachlichen Austauschs zwischen den Unternehmen und gab uns neue Impulse für fachliche Positionen. Nach der verbandsinternen Reform in 2001 folgte der Zusammenschluss mit den Landesverbänden in Brandenburg, Rheinland-Pfalz und Schleswig-Holstein in 2002. Somit waren wir in zwölf Bundesländern aktiv: in Baden-Württemberg, Bayern,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chsen, Schleswig-Holstein und Thüringen.



## Europa

In 2001 wurden unsere beiden europäischen Fachnetzwerke (ENSIE und RREUSE) endlich gegründet. In Kooperation mit CECOP (Europäische Konföderation der Produktions- und Arbeits-Genossenschaften) und EMES (Netzwerk von Forschungszentren, die sich mit der Sozial- und Solidarökonomie sowie mit der Erforschung im Bereich der sozial-ökonomischen Betriebe befassen) wurde eine erste Übersicht über die Bandbreite der sozialen Integrationsunternehmen in Europa an Hand von wissenschaftlichen Studien und Fallbeispielen mit ENSIE erarbeitet. Darüber hinaus untersuchte ENSIE die Gestaltung des betrieblichen Dialogs in den Mitgliedsstaaten (z.B. Tarif und Mitarbeiterbeteiligung) und die ordnungspolitischen Rahmenbedingungen für Integration von benachteiligten Menschen (rechtliche Rahmen, Unternehmensformen, soziale Gesetzgebung usw.). Ursprünglich hofften wir, gemeinsame Leitlinien hierfür zu entwickeln, aber merkten in der intensiven Zusammenarbeit miteinander, dass der jeweilige Integrationsauftrag unterschiedlich im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Geschehen verankert war. Im Verlauf der Zusammenarbeit war es wichtig zu dokumentieren, dass die Zielsetzung der Integrationsarbeit in den Ländern stark voneinander abweicht - von Überbrückungsbeschäftigung bis hin zur dauerhaften Beschäftigung in sozialen Integrationsbetrieben. Diese vertiefte Auseinandersetzung mit den unterschiedlichen Systemen brachte ein neues Verständnis innerhalb des Netzwerks für die Stärken und Schwächen der Systeme, die uns später in fachlichen Anhörung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r Kommission positiv kennzeichnen sollte.

In den Jahren 2002 - 2003 war die europäische Richtlinie über Elektro- und Elektronik-Altgeräte (WEEE directive) Hauptschwerpunkt für die Tätigkeit des Netzwerks RREUSE. Das Renommee, das sich RREUSE durch die inhaltliche Mitarbeit an

der Richtlinie auf europäischer Ebene erarbeitet hat, wurde deutlich durch die Anerkennung von RREUSE als offizieller Gesprächspartner für die Generaldirektion Umwelt in allen abfallwirtschaftlichen Fragen, durch Einladungen von RREUSE-VertreterInnen zu diversen Arbeitsgruppen und Veranstaltungen dieser Generaldirektion. Nach der Verabschiedung der Richtlinie im Januar 2003 hat die zuständige RREUSE-Arbeitsgruppe Positionen für die Umsetzung dieser Richtlinie für die jeweiligen nationalen Gesetzgebungen erarbeitet und diesen Prozess während des gesamten Jahres begleitet und koordiniert. Dabei war der Austausch von Informationen über die jeweilige Vorgehensweise der Gesetzgeber, Herstellerverbände und privaten Entsorger für die Formulierung der Positionen der nationalen Netzwerke, auch der Fachgruppe Gebrauchsgüter und Recycling (FGR), sehr hilfreich.

Die Entscheidung, in beiden Netzwerken mitzuwirken, hat unsere Arbeit fachlich vertieft und der Blick über den Tellerrand hat uns den Öfteren geholfen, neue Ansätze in fachliche Diskussionen hereinzutragen.

## Benchmarking

Bereits in 2001 haben sich mehrere Mitgliedsunternehmen zusammengefunden, um das Thema Benchmarking für unsere Betriebe zu eruieren. Benchmarking analysiert Vergleichsdaten und fragt: „Wie machen es wohl andere?“, „Warum machen es andere anders?“, „Unter welchen Rahmenbedingungen machen es die anderen besser?“, um daraus zu lernen und ein optimales Unternehmensergebnis erzielen zu können. „Lernen“ ist auch das Grundprinzip der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unternehmen. Zu analysieren gilt es welche Vorteile soll Benchmarking denen bringen? Wie soll Benchmarking bei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unternehmen funktionieren?

Angesichts der Vielzahl von Tätigkeitsfeldern mit unterschiedlichen

Zielgruppen und sehr differenzierten regionalen Bedingungen der Mitgliedsunternehmen der bag arbeit begleitete die Arbeit des Arbeitskreises ständig die Frage: Sind diese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unternehmen überhaupt vergleichbar? Im Herbst 2002 konnte dies mit einem Ja für den Vorstand beantwortet werden. Es wurde entschieden, ein verbandseigenes Benchmarking-System und Programm zu entwickeln. Hierzu bedurfte es einheitlicher Definitionen von Begriffen wie „Stammkraft“ und allen war klar, dass es nur funktionieren würde, wenn es gelingt, die unterschiedlichen Rahmenbedingungen (z.B. der Refinanzierung oder der Zielgruppe) klar zu benennen und diese bei einer Auswertung isoliert betrachten zu können.

In 2004 stand das System und die Programmierung der Datenbank wurde abgeschlossen. Der Vorstand bestätigte das Verfahren und es ging in das erste bundesweite Erhebungsjahr! Benchmarking ist Vertrauenssache und die Ergebnisse der jährlichen Auswertungen stehen nur den an der Erhebung beteiligten Unternehmen zur Verfügung. In Workshops werden sie analysiert und in der Tiefe betrachtet. Hier findet dann der eigentliche Sinn des Verfahrens statt, das miteinander vergleichen und voneinander lernen.

## Die Jahrestagungen

Die Jahrestagungen wurden bereits in den 90er Jahren zum jährlichen Höhepunkt im Verbandsleben. Zunehmend wurden diese Tagungen neben unseren Mitgliedsunternehmen von Vertreter/innen aus Politik, Wirtschaft und Verwaltungen wahrgenommen und zum fachlichen Austausch genutzt.

Die Jahrestagung im Juni 2002 „Wann, wenn nicht jetzt! Wer, wenn nicht wir!“ fand in Berlin statt. Die Grundsatzrede wurde von Bundesarbeitsminister, Walter Riester, gehalten. Er lobte das große Engagement der Träger der bag arbeit, die sich mit hohem ethischen Anspruch teilweise bis hin zur Selbst-

aufgabe der Menschen annehmen, die mit den Gesetzhaltungen des Marktes nicht zurecht kommen. Vorausschauend boten wir auf dieser Tagung einen Workshop zur Zusammenlegung der Arbeitslosen- und Sozialhilfe an, obwohl dies noch nicht beschlossene Sache war.

Im Mai 2003 fuhren wir mit der Jahrestagung nach Mainz und mit über 200 Teilnehmer/innen diskutierten wir zum Thema „Zukunft Arbeit“ über die Notwendigkeit sinnstiftender Arbeit in den Unternehmen, über Vergaberecht und die Trägerschaft einer neuen Gesamtleistung. Das Grundsatzreferat wurde von MinDir Bernd Buchheit vom damaligen BMA gehalten. Einigkeit bestand bei vielen Referenten darüber, dass die geplanten Veränderungen durch die Gesetze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auch die Gruppe mit hohen Vermittlungshemmnissen erreichen müssen und dass die gut funktionierenden Strukturen des geförderten Arbeitsmarktes nicht aus der Verunsicherung heraus zerstört werden dürfen, um sie später wieder mühsam aufzubauen.

In 2004 kehrten wir mit der Tagung „Integration in Arbeit gemeinsam gestalten! Agentur – Kommunen – Beschäftigungsunternehmen“ nach

### Das Hochwasser 2002

Die Mitgliedsorganisatio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lieben nicht vom Hochwasser im August 2002 verschont. Der Landesverband Sachsen wurde mit dem sofortigen Aufbau einer Koordinierungsstelle für Hilfeleistungen vom Land Sachsen beauftragt und konnte schnell, unbürokratisch und erfolgreich diesen Auftrag umsetzen. Viele Mitgliedsorganisationen sowohl in den alten als auch den neuen Bundesländern haben spontan ihre Unterstützung und Mithilfe angeboten. Der Bundesverband konnte bei der Weiterleitung von Hilfestellung und beim Suchen nach passgenauen Partnern für das Vorhaben helfen.

Berlin zurück und präsentierten unterschiedliche Modelle der Zusammenarbeit der Arbeitsagenturen und Kommunen. Vor dem Hintergrund des Umstellungsjahrs waren Organisation und Inhalte öffentlich geförderter Beschäftigung im SGB II sowie Vergaberecht ebenfalls zentrale Themen der Fachreferate. Colin Zetie von Employment Initiatives Manager von Groundwork East aus London gab uns einen Einblick in die aktivierende Arbeitsförderung und die regionale Vermittlung in Großbritannien. Das Grundsatzreferat zur Frage der Kooperation vor Ort hielt Dr. Martin Wienand vom Deutschen Städtetag.

### Resümee

Die Jahre 2002 - 2004 standen im Zeichen der Gesetze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und für uns insbesondere mit der Einführung und Umstellung auf das SGB II. Die drei Jahre erforderten viel Flexibilität von unseren Unternehmen, boten aber viele Chancen uns fachlich einzubringen und unsere Position als Fachverband zu stärken.

Die Unsicherheiten, wie das neue Gesetz tatsächlich umgesetzt werden sollte und was auf unsere Unternehmen zukommen würde, dominierten viele Tagungen und Workshops insbesondere in 2004. Beschäftigungsschaffende Instrumente wie ABM, AGH-MAE und AGH-Entgelt wurden alle in §16 des neuen Gesetzes übertragen, die Frage war, welche Rolle sie spielen würden und wie sie örtlich eingesetzt werden.

Die Vielfalt der Projektarbeit mit den Mitgliedsunternehmen brachte uns ebenfalls neue fachliche Impulse und vernetzte viele Mitgliedsunternehmen in diesen unsicheren Zeiten auf eine neue Art und Weise.

In der nächsten Ausgabe forum arbeit beschäftigen wir uns mit den Umsetzungsjahren 2005 - 2009, mit der Umsetzung des SGB II vor Ort, dem Streit um die sonstigen weiteren Leistungen, dem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er Aufgabenwahrnehmung und mit der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

### Die Jahre 2002 - 2004 im Überblick

**2002** Berufung der Hartz-Kommission – bag arbeit wird angehört

bag arbeit nimmt Stellung zu den Vorschlägen

Gesetze I & II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werden verabschiedet

Projekte „Kooperation statt Konkurrenz“ und „Second Chance“ starten

Zusammenschluss mit Landesverbänden in Brandenburg, Rheinland-Pfalz und Schleswig-Holstein

Hochwasser und der Einsatz der Mitgliedsunternehmen

**2003** bag arbeit ist Sachverständige bei der Anhörung zum SGB II

bag arbeit nimmt Stellung zu Kürzungen bei ABM

Gesetze III & IV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werden verabschiedet

**2004** bag arbeit fordert Übergangsregelungen für Eingliederungsmaßnahmen während der Einführung des SGB II

bag arbeit nimmt Stellung zum Optionsgesetz

bag arbeit veröffentlicht Empfehlungen für Umsetzung §16

bag arbeit nimmt Stellung zum BvB-Konzept

tischen Instrumente. Ebenfalls kamen neue Projekte wie die Entwicklung unseres Kompetenzentwicklungssystems (KES/KEN).

Truda Ann Smith  
Geschäftsführerin  
bag arbeit e.V.  
Tel. 030 / 28 30 58 14  
Fax 030 / 28 30 58 20  
smith@bagarbeit.de  
www.bagarbeit.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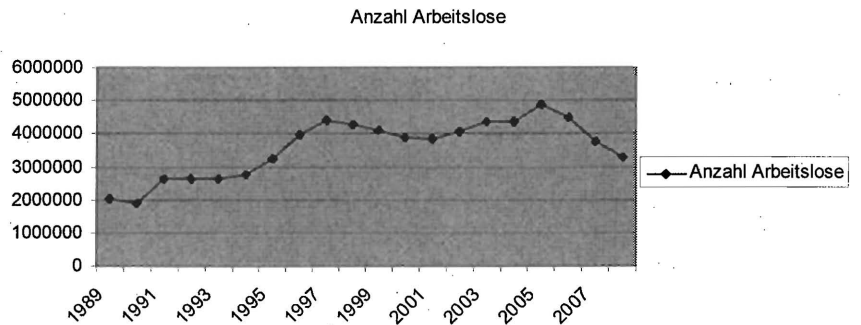
## 20 Jahre bag arbeit - eine Chronologie (Teil 4)

Ein Beitrag von Truda Ann Smith

Im vierten Teil der Chronologie konzentrieren wir uns auf die Jahre 2005-2009, mit der Umsetzung des neu in Kraft getretenen SGB II vor Ort, dem Streit um die sonstigen weiteren Leistungen, dem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Aufgabenwahrnehmung, mit der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und der Entwicklung unseres Kompetenzentwicklungs-Systems (KES/KEN).

### Deutschland Ende 2004

Ende 2004 lag die Arbeitslosenquote bei 10,5% (438.281 Menschen). Sie war auf das gleiche Niveau wie 1997 angestiegen (höchste Arbeitslosenquote seit der Wiedervereinigung). Im Zeitraum 1991-2004 stieg die Arbeitslosigkeit in Westdeutschland von 1,6 Mio. Menschen auf 2,8 Mio. (7,2% auf 9,4%) und in Ostdeutschland von 1 Mio. auf 1,6 Mio. (10,2% auf 20,1%). Unabhängig von der konjunkturellen Entwicklung ist die Anzahl der Arbeitslosen in beiden Teilen der Republik in jener Zeit fast stetig gestiegen. Die Arbeitslosigkeit wurde zu einem der größten sozialen Probleme. 2004 war das letzte Jahr des BSHG und der Arbeitslosenhilfe, beide sollten zum Jahresende gesetzlich außer Kraft treten und die Zielgruppen im neuen SGB II gebündelt werden. Das SGB II sollte das neue Fürsorgegesetz werden, das beide Leistungen mit der Zielsetzung der Beendigung oder Verringerung von Hilfebedürftigkeit insbesondere durch Eingliederung in Arbeit zusammenfasst. 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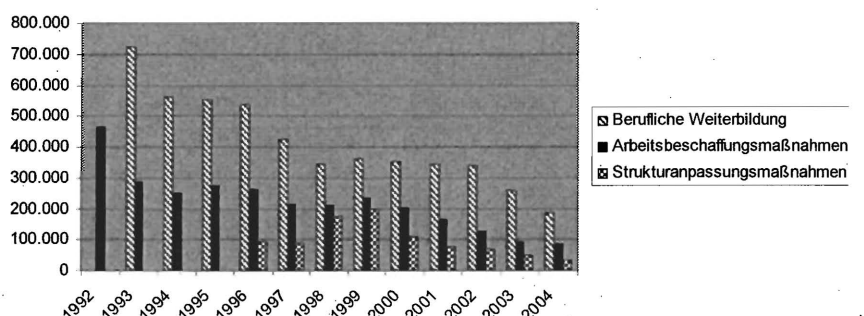
stand im Kontrast zum damaligen SGB III, das grundsätzlich regelte: „Leistungen der Arbeitsförderung sollen dazu beitragen, dass ein hoher Beschäftigungsstand erreicht und die Beschäftigungsstruktur ständig verbessert wird. Sie sind insbesondere darauf auszurichten, das Entstehen von Arbeitslosigkeit zu vermeiden oder die Dauer der Arbeitslosigkeit zu verkürzen.“

2004 waren durchschnittlich ca. 86.000 Menschen in ABM beschäftigt. Zusätzlich zu diesen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waren im gleichen Jahr 32.000 Menschen in SAM-Maßnahmen integriert. Ca. 184.000 Teilnehmer/innen nahmen an einer Umschulungsmaßnahme, einer Fortbildung oder Trainingsmaßnahme teil. Im 10-Jahresvergleich mit 1994 sind im Bereich FbW und

ABM fast 2/3 der Angebote abgebaut worden (über 500.000 Plätze). In den 10 Jahre hat eine Vielzahl anderer Instrumente diese Kernelemente der Eingliederungsarbeit ergänzt und ersetzt.

Für die Ermessensleistungen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in 2004 hatte der Eingliederungstitel ein Volumen in Höhe von 9,2 Mrd. Euro, woraus über 1,6 Mio. Menschen Angebote von FbW über PSA bis zu EGZ, ABM und Existenzgründungszuschüsse u.v.a. bekamen. Die Globalisierung hat in den deutschen Arbeitsmarkt voll durchgeschlagen. Zehn neue Mitgliedsstaaten wurden im Mai 2004 in die EU aufgenommen. Alle waren gespannt – würde die Umstellung auf das SGB II klappen?

TeilnehmerInnen - Jahresdurchschnitt



## 2005 - das erste Umsetzungsjahr

Nach 16monatiger politischer Debatte trat das neue SGB II am 01.01.05 vollständig in Kraft. Nach 100 Tagen haben wir gleich im April 2005 eine erste Bilanz zu den Arbeitsgelegenheiten veröffentlicht mit Angaben zur Zuweisung, durchschnittlichen Arbeitszeit, Teilnehmerstruktur, zu Veränderungen in den betrieblichen Strukturen, Umfang der Fallpauschalen, Qualifizierung und Vermittlung verbunden mit einer Aufforderung zur Änderung der Abgabenverordnung und zur Aktivierung der passiven Leistungen zur Refinanzierung von mehr Entgelt-Plätzen. Wir wollten mit diesem Zwischenbericht den Dialog zur Umsetzung mit der Politik beginnen. Auf eine Auswertung im Herbst oder sogar im Jahre 2006 zu warten, hätte aus unserer Sicht in vielen Fällen Präzedenzen gesetzt, die dann nicht mehr rückgängig zu machen gewesen wären oder nur mit erheblichem Aufwand hätten umgesteuert werden können.

### Unsere Aussagen 2005:

#### Zusätzlichkeit

„Wichtig für die erfolgreiche Integrationsarbeit bleibt, dass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sinnstiftend, qualifizierend und integrativ wirkt. Um ausreichend Arbeitsplätze und -gelegenheiten nach diesen inhaltlichen Kriterien zu schaffen, ist es wichtig, dass die Akteure vor Ort im Konsens entscheiden, welche Art der drei Arbeitsbeziehungen für den Einzelnen integrierend wirkt (Entgeltvariante, Mehraufwandsvariante oder ABM), welche Dauer die Arbeitsverhältnisse haben sollen, welche Zielsetzung mit der Integrationsarbeit verfolgt wird und wo sie stattfindet. Eine Vielzahl der zukünftigen Zusatzjobs muss eine Arbeitsmarktrelevanz haben. Hierzu müssen für die sozialrechtliche Arbeit (Zusatzjobs) bei nachvollziehbarer Begründung der Verbesserung der Integrationschancen und im Konsens mit der allgemeinen lokalen Wirtschaft auch marktnahe Einsatzfelder

ermöglicht werden. Durch eine zu enge Definition gemeinnütziger und zusätzlicher Arbeit können vor Ort nicht ausreichend wirkungsvolle Arbeitsplätze und -gelegenheiten geschaffen werden.“

„Beim Umgang mit Zusätzlichkeit in den Regionen sollten wir aufpassen, dass die Chance nicht verpasst wird, ein Beschäftigungskonzept zu präsentieren, das der gesamten Qualifikationsstruktur der ALG-II-Berechtigten entspricht. Wenn zum Beispiel im Einsatzbereich Gewerbe und Handwerk keine Einsatzfelder zugelassen werden, die auf breiter Ebene handwerkliche Fähigkeiten vermitteln könnten, bleibt die große Personengruppe unqualifizierter bzw. teilqualifizierter Arbeitsloser außen vor, obwohl es einen hohen Bedarf an kleineren handwerklichen Tätigkeiten gibt.“

#### Marktersatzquote

„Im Bereich ABM und Arbeitsgelegenheiten werden gegenwärtig etwas mehr als ein halbes Prozent der gesamten Erwerbsbevölkerung beschäftigt. Für viele dieser Beschäftigten ist dies die einzige Möglichkeit, nah am Erwerbsleben zu bleiben für andere stellt sich die Frage, ob eine dauerhafte Eingliederung in den 1. Arbeitsmarkt überhaupt realisierbar ist. Zur Lösung vieler der Steuerungsprobleme in der Arbeitsmarktpolitik schlagen wir vor, eine Marktersatzquote einzuführen, die den ARGen und optierenden Kommunen eine wirklich regionale Arbeitsmarkt- und Eingliederungspolitik und unbürokratisches Handeln ermöglicht. Hierzu schlagen wir den politischen Entscheidungsträgern vor, die Quote auf Bundesebene auf 1,5 Prozent der Gesamterwerbsbevölkerung festzulegen, die Gesamtanzahl der Arbeitsplätze dann regional differenziert nach Indikator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gionalen Besonderheiten und der strukturellen Defizite aufzuteilen und diese Festlegung im Konsens mit allen Akteuren der Arbeitsmarktpolitik zu vereinbaren. Innerhalb dieser regionalen Quoten müsste im

2. Schritt dann eine Art „Integrationsleiter“ regional erarbeitet werden, mit verschiedenen Bausteinen und Ein- und Ausgangsstufen, die die erforderlichen unterschiedlichen Integrationsziele, Integrationsdauer und Markteteiligung regelt und widerspiegelt. Innerhalb dieser Quote wäre es wichtig die Organisation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zu strukturieren, die Art der Qualitätssicherung zu eruieren und die Integrationsziele festzulegen.“

### AG Zusatzjobs

Im Juli 2005 wurden wir eingeladen, in der Arbeitsgruppe „Zusatzjobs“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 Arbeit mitzuwirken. In der Arbeitsgruppe sitzen Vertreter der Arbeitgeberverbände, der Gewerkschaften, der Städte und Kommunen und der freien Wohlfahrtsverbände sowie des Bundesministeriums und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Gleich im August 2005 konnten wir dann an der Endfassung der Arbeitshilfe für Arbeitsgelegenheiten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mitwirken und unseren fachlichen Rat an vielen Stellen einbringen.

Die damals gültige Fassung der Arbeitshilfe haben wir als Verband offiziell mitgetragen. Bei der Überarbeitung in 2007 konnten wir, wie auch andere Mitglieder der Arbeitsgruppe, die neue Fassung nicht mittragen. Die ursprüngliche Arbeitshilfe war als „Eckpunkt“, „Empfehlung“ und „Vorschlag“ zu verstehen, die die Entscheidungen zur regionalen Umsetzung vor Ort unterstützen sollte. Durch den Teil B in der neuen Fassung (Fachliche Hinweise [verbindliche Weisungen]) hatte sich der Charakter der Arbeitshilfe aus unserer Sicht gravierend verändert.

### RIS

Aufbauend auf unsere Auswertungen in 2005 entwickelten wir in 2006 unseren Konzeptvorschlag Regionales Integrations-System - RIS. Dieses sah, anders als viele damalige Vorstellungen, nicht die Verlängerung von Aktivierungsmaß-

nahmen bis hin zur dauerhaften Beschäftigung vor, sondern favorisierte den Aufbau Regionaler Integrations-Systeme. Ziel dieser Systeme sollte es sein, für die SGB II-Zielgruppe alternative Integrationswege zu eruieren, zu organisieren und den betroffenen Personen zu unterbreiten. Sie sollten durch die ARGE oder optierende Kommune gesteuert werden, unterstützt durch Träger, die private Wirtschaft, Kammern und Verbände. Die Integrationswege wären im Rahmen von individualisierten Integrationsleitern als Bestandteil eines regionalen Integrationskonzeptes zu planen. Während des Erst-Angebots „Arbeit“ (durchaus als Arbeitsgelegenheit denkbar) sollten die Fallmanager aus der ARGE oder optierenden Kommune gemeinsam mit dem/den beauftragten Träger(n) die individuelle Integrationsleiter des Arbeitslosen planen, sie definieren gemeinsam ein persönliches Integrationsziel für den Teilnehmer und entscheiden über Art und Umfang des Einsatzes der unterschiedlichen Eingliederungsinstrumente. In diesem Rahmen könnte zum Beispiel ein Integrationsbudget für den Einzelnen vereinbart werden, das sich über längere Abschnitte und Integrationsphasen erstreckt.

Nach der Erst-Angebotsphase, argumentierten wir damals, könnte analog der entwickelten Integrationsleiter die AGH MAE in andere Eingliederungsinstrumente aus dem kompletten Paket des SGB II bzw. des SGB III umgewandelt werden (z.B. Entgelt, Arbeitnehmerleih, ABM, Fortbildung, Erstausbildung, Eingliederungszuschüsse etc pp). Einsatzbereich und Dauer der Zuweisung hängen immer von der individuellen Integrationsleiter ab. Wo immer möglich sollte die Vermittlung in Beschäftigung in die allgemeine Wirtschaft Vorrang haben, auch die Vermittlung in kurzzeitig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Ausnahmen sollen hier nur bei Jugendlichen ohne Berufsausbildung gemacht werden). Denn unmittelbar nach einem erneuten Jobverlust oder Vertragsende sollte der Einzelne sofort zur öffent-

lichen geförderten Beschäftigung (RIS) zurückkehren können. Dies wäre zwingend notwendig, um die neu erreichte Beschäftigungsfähigkeit zu erhalten, deren Weiterentwicklung zu ermöglichen, die Beschäftigungschancen des Einzelnen zu verbessern und um die Nachhaltigkeit der Investition abzusichern.

In unserem Fazit damals stellten wir dar, dass: „Die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würde hierbei eine neue Rolle übernehmen – sie wird für einzelne Personen zu einem Ort der immer wiederkehrenden Beschäftigung aber idealerweise niemals zum einzigen Beschäftigungsort. Für manche würde der Integrationspfad in eine dauerhafte soziale Beschäftigung münden, die sich zwangsläufig aus den Vermittlungsbemühungen ergibt, aber nicht als Beschäftigungsziel feststeht. Somit entfällt die Notwendigkeit in einem durchlässigen System, das die Region gestaltet, Zielgruppen extra zu identifizieren, sondern es entsteht die Möglichkeit, die Chancen für die Gesamtzielgruppe (bis zu 500.000 Plätze bundesweit) zu verbessern.“

Unsere Vorstellungen haben wir auf einer Reihe von Fachveranstaltungen mit großer Bandbreite bundesweit vorstellen können und in Gespräche mit VertreterInnen der Politik, der Arbeitsverwaltung, dem Ministerium und anderen Verbänden diskutiert. Die fachliche Resonanz auf RIS war hervorragend. Damals wurde RIS durchschnittlich alle 14 Tagen in der BRD präsentiert.

### **Job Perspektive**

In 2007 wurden von der Politik konkrete Vorstellungen für eine längerfristige bis hin zur dauerhaften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von schwer benachteiligten Menschen unterbreitet, die in ein Job-Perspektive-Gesetz mündeten. Hierzu nahmen wir von Anfang an kritisch Stellung und haben unter anderem vor der Etat-Belastung zum Nachteil anderer Zielgruppen gewarnt. Ebenfalls haben wir auf Probleme hinsichtlich der damals

vorgesehenen Einschränkung auf Zusätzlichkeit und auf die Höhe des Kofinanzierungsbedarfs für die Zielgruppe hingewiesen.

Die Hauptmerkmale des neuen Instruments sollten sein:

- 1) Förderdauer 24 Monate mit Möglichkeit auf Verlängerung (bereits möglich)
- 2) „Beschäftigungszuschuss“ bis 75% eines tariflichen bzw. ortsüblichen Lohns (bereits möglich, aber mit § 16 SGB II kann auch mehr gefördert werden)
- 2) Keine Arbeitslosenversicherung
- 3) Förderung von Qualifizierungskosten bis 200 Euro pro Monat für 12 Monate (bereits möglich)
- 4) Förderung der Aufbaukosten, wenn Strukturen nicht bereits vorhanden sind (bereits möglich mit den Fallpauschalen)
- 5) Es können nur Arbeiten nach § 260 SGB III gefördert werden (§ 260 ABM-Grundsatz)
- 6) Die Förderung von schwer vermittelbaren Personen (bereits möglich)

Mit der Ausnahme des Wegfalls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waren alle diese Rahmenbedingungen bereits in § 16 SGB II (Arbeitsgelegenheiten in der Entgeltvariante) verankert und zwar sowohl für die vorgesehene Zielgruppe als auch für alle anderen hilfebedürftigen Leistungsempfänger/innen. Das die ARGE und optierenden Kommunen dieses bisher nicht im größeren Umfang umgesetzt hatten, hatte zum größten Teil fiskalische Gründe, da eine Aktivierung der passiven Leistung, wie wir dies bereits in 2005 gefordert haben, nicht möglich war. Somit tat es aus unserer Sicht nicht Not, ein neues Instrument gesetzlich zu verankern.

Im Herbst 2007 wurde das Job-Perspektive-Gesetz vom Bundestag verabschiedet. Bis Ende 2009 sollen 100.000 Plätze gefördert werden. Anfang 2008 haben wir eine Verbandsabfrage zur ersten



Bewilligungswelle gemacht, um Trends abzulesen, aber auch um den Erfahrungsaustausch unter den Verbandsmitgliedsunternehmen zu unterstützen.

An der Abfrage hatten 29 Unternehmen teilgenommen, die bereits bewilligte Plätze hatten oder kurz vor Bewilligung standen. Weitere Betriebe hatten uns darüber informiert, dass sie mit ihren Verhandlungen noch nicht weit genug fortgeschritten waren, um den Erhebungsbogen ausfüllen zu können. Von den 29 Betrieben hatten fünf Betriebe (17%) bereits insgesamt 25 Plätze bewilligt bekommen. Diese Plätze waren ausschließlich im eigenen Unternehmen und alle für Ü25 (darunter 4 Plätze = 56 % für die Zielgruppe Ü50). 24 Betriebe hatten sich als in Verhandlung stehend gemeldet. Hierbei wurde über 862 Plätze bundesweit verhandelt. Diese Plätze waren nicht ausschließlich im eigenen Betrieb vorgesehen (nur in ca. 12 Betrieben), in 9 Betrieben wurden die Arbeitsplätze teilweise bei Dritten angesiedelt und in weiteren 2 Betrieben sollten die Plätze ausschließlich bei Dritten sein. In dieser Verhandlungsmasse wurden uns explizit 10 Plätze für Jugendliche gemeldet. Die restlichen 852 Plätze waren für Ü25. Die überwiegende Anzahl dieser Plätze war für ältere Arbeitslose, Arbeitslose mit gesundheitlichen Einschränkungen oder Arbeitslose mit fehlenden oder mangelnden Berufs- oder Schulabschlüssen. 21 von 29 Betriebe meldeten, dass sie den maximalen Zuschuss (75%) bekommen werden und für 85% der vorgesehenen Plätze stand eine Kofinanzierung bereit.

Im Laufe des Jahres stand fest, dass die Frage der Refinanzierung der verbleibenden 25% der Kosten sowie die Identifizierung und Auswahl der Teilnehmer/innen vor Ort eine der größten Hürden für die Umsetzung werden würde, so dass bis Ende des Jahres bundesweit nur 23.647 der in 2008 vorgesehenen 60.000 Plätze nach den entsprechenden Bundesrichtlinien tatsächlich bewilligt und belegt waren.

## Sonstige weitere Leistungen SGB II

Parallel zu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m Referentenentwurf für eine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wurde im April 2008 die Umsetzung von Maßnahmen der sonstigen weiteren Leistungen nach § 16 Absatz 2 Satz 1 SGB II massiv eingeschränkt und eine restriktivere Auslegung des Paragraphen als bisher in einer Arbeitshilfe definiert. Anfänglich sollten viele bereits begonnene und bewilligte innovative Maßnahmen zum 30.06.08 enden. Moniert wurde, dass die Maßnahmen andere Paragraphen des SGB II und III nicht umgehen oder aufstocken durften. Zu diesem Zeitpunkt bildeten die Maßnahmen nach § 16 Absatz 2 Satz 1 bis zu 25% der Eingliederungsausgaben in manchen Grundversicherungsstellen.

Wir argumentierten: „Die Geschäftsanweisung verlangt die rasche Beendigung vieler existierender Maßnahmen. Erfolgreiche Integrationsarbeit wird damit abgebrochen. Menschen, die sich mühsam und hoffnungsvoll eine neue Arbeits- und damit Lebensperspektive aufbauen, werden erneut ins Abseits gestellt. Mit der rigiden Geschäftsanweisung wird billigend in Kauf genommen, dass viele Träger, die im Vertrauen auf die Verlässlichkeit der Öffentlichen Hand in der Umsetzung von Maßnahmen tätig geworden sind, in den finanziellen Ruin getrieben werden.“

Zeitgleich sind vom BMAS die „Eckpunkte einer Reform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in den politischen Raum gegeben worden. In diesem Zusammenhang konstatierten wir: „Mit der geplanten ... Reform soll ab 01.01.2009 u.a. auch Ersatz für bisher im Rahmen des § 16 (2) geförderte Maßnahmen geschaffen werden. So soll z.B. die Förderung von Hauptschulabschlusskursen ermöglicht werden, soll ein Experimentiertopf geschaffen werden, um innovative Maßnahmen zu ermöglichen. Das sind sehr

richtige Initiativen – und damit wird voraussichtlich genau das ermöglicht, was mit der Arbeitshilfe SWL und der Geschäftsanweisung Nr. 13 möglichst bis zum 30.06.2008 abgeschafft sein soll.“

Auf Grund unserer Intervention konnten wir das BMAS und die BA überzeugen, diese Frist aufzuheben und die Maßnahmen auslaufen zu lassen und weitere Maßnahmen zuzulassen, wenn dokumentiert wurde, warum die Instrumente des SGB III für die Integrationsvorhaben nicht greifen konnten. Infolge dessen wurde auch die Kombination der Instrumente nach §§ 37 und 48 ermöglicht, um längere Maßnahmen nach SGB III zu gestalten.

##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 der Gesetzentwurf

Im Herbst 2008 begann das Gesetzgebungsverfahren zur geplanten Neuausrichtung. Mit unserer Stellungnahme vom 30.11.2008 haben wir dem Gesetzgeber ein grundsätzlich anderes Fördersystem mit vier Förderkategorien vorgeschlagen:

- o Aktivierung für die Förderung der Zielgruppe, Angebote der Hilfe annehmen zu können und annehmen zu wollen
- o Qualifizierung und Berufsausbildung, die sich an den spezifischen Anforderungen eines jeden Einzelnen ausrichtet
- o Eingliederung in den Arbeitsmarkt durch Bewerbungsförderung und Vermittlung mit nachhaltigen Strategien
- o Geförderte Beschäftigung, die die Merkmale der Aktivierung, der Qualifizierung aber auch eines Ersatzarbeitsmarktes beinhaltet und sich durch eine große Marktnähe auszeichnet.

Dieses System sollte mit einem System der Qualitätssicherung und qualitativen Einkaufsverfahren eng verknüpft werden. Das hierfür notwendige Steuerungssystem, schlugen wir vor, sollte folgendes berücksichtigen:

- o klare Vereinbarung von Zielen („was“), aus denen regionale Budgets gebildet werden
- o Handlungsfreiheit bei der Zielerreichung im so gegebenen Rahmen („wie“)
- o Transparenz und laufende Berichterstattung über die Umsetzung
- o sofortige und flexible Verbesserung der Praxis bei erkennbarer Unwirksamkeit

Das Gesetz für die Neuausrichtung wurde am 05.12.2008 vom Bundestag angenommen. Änderungen gegenüber dem ersten Gesetzentwurf wurden zur Höhe der Innovationsförderung nach § 16f vorgenommen (bis 10% des Eingliederungsbudgets) und das Aufstockungs- und Umgehungsverbot gegenüber anderen Instrumenten für Langzeitarbeitslose wurde aufgehoben.

Diese Neuausrichtung fasst einen großen Teil der Integrationsarbeit ab 2009 in zwei wesentlichen neuen Instrumenten zusammen: § 45 SGB III Vermittlungsbudget und § 46 SGB III Maßnahmen zur Aktivierung und beruflichen Eingliederung (beide gültig für SGB II durch § 16). Diese Paragraphen ersetzen die alten §§ 37 und 48 sowie die PersonalServiceAgenturen und die innovativen Maßnahmen nach § 421i und § 241 SGB III. Nach § 46 wurden sowohl kurzzeitige Bewerbungstrainings und -unterstützung als auch sozial-pädagogische Betreuung förderbar und auch Arbeitnehmerüberlassung sowie kurze Qualifizierungseinheiten (unter 8 Wochen) können gefördert werden. Konfliktintervention und Begleitung nach der Vermittlung während der Probezeit wurde ebenfalls förderbar.

Im Zuge der Reform wurde das Instrument ABM im SGB II gestrichen und nur noch für Leistungsempfänger/innen nach SGB III relevant. Wir haben im Reformprozess dafür gewarnt, ABM generell abzuschaffen, weil es sich, sofern es zielgerichtet eingesetzt wurde, als

ein funktionierendes Instrument der Verknüpfung von regionaler Arbeits- und Infrastrukturförderung bewährt hat. Mit der Reform entfiel ebenfalls die explizite Ausrichtung der Leistungen der Arbeitsförderung auf die Weiterentwicklung der regionalen Infrastrukturen (§ 1 SGB III). Damit wurde ein zentraler Handlungsansatz insbesondere der Instrumente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abgeschafft, die Ausrichtung von Ersatzarbeitsmarktangeboten mit der (Infra)Strukturentwicklung in den Regionen zu verbinden.

Im Laufe des gesetzgeberischen Prozesses haben wir zwei Stellungnahmen veröffentlicht (Juni und Oktober 2008). Wir haben die parlamentarische Anhörung begleitet und auf mehreren Fachtagungen zur Reform über unsere Alternativ-Vorschläge referiert sowie Gespräche mit der Politik, Verwaltung und anderen Verbänden geführt.

### **Bundesweite ESF-Konsultation 2007**

Mit den Landesverbänden gemeinsam haben wir Ideen, Forderungen und Anregungen für die operativen Programme für die neue ESF-Förderperiode ab 2007 entwickelt und in den Konsultationsprozess eingebracht. Zentral hierbei war die Berücksichtigung unserer Zielgruppe (langzeitarbeitslose Personen) im Rahmen von Programmen zur Entwicklung regionaler Lösungen für ihre Integration, Unterstützung von flankierenden Maßnahmen, Netzwerkverstärkung, Lösung der Konsequenzen des Fachkräftemangels und der Fachkraftmigration. Ebenfalls schlugen wir ein Programm zur Stärkung der Strukturen der Sozialwirtschaft vor. Ferner haben wir mehrere handwerkliche Empfehlungen zur Auszahlung, Kofinanzierung und Durchreichung zur Vereinfachung des Verwaltungsaufwands eingereicht.

### **Projektarbeit bei der bag arbeit**

In 2005 haben wir gezielt neue Themen besetzt und so die inhaltliche Richtung der Verbandsarbeit noch-

mals diversifiziert, insbesondere im Bereich der Personalentwicklung für MigrantInnen einschließlich einer entsprechenden Dokumentationssoftware und auf dem Gebie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benfalls in 2005 haben wir das Projekt Wandel-Innovation-Botschaft im Rahmen des EQUAL-Programms begonnen, das sich zum Ziel setzte, Unternehmen bei der Umsetzung der neuen regionalisierten Arbeitsmarktpolitik zu unterstützen und im Rahmen dieses Paradigmenwechsels den neu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Wert der öffentlich geförderten Beschäftigung darzustellen.

### **Integrationsförderung für Migrant/innen: – Kompetenzen analysieren, erfassen und fördern – Das Kompetenz-Entwicklungs-System (KES)**

Mit dem Projekt KES hatten wir uns zum Ziel gesetzt, ein Instrumentarium zur Kompetenzanalyse und Kompetenzerfassung für Erwachsene mit Migrationshintergrund zu entwickeln, um die berufliche Integration der Zielgruppe gezielter als bislang zu fördern. Aufbauend auf diesem Instrumentarium wurde im Projekt ein serverbasiertes elektronisches Tool (Kompetenz-Erfassungs-Notebook KEN) entwickelt, das Kompetenzerfassung für Migrant/innen unterstützt, die Entwicklung von Kompetenzen strukturiert und systematisiert und die Erarbeitung einer Kompetenzdokumentation ermöglicht. Die Kompetenzdokumentation in Form eines Portfolios sowie eines Lebenslaufdokumentes stellt die mit KEN erarbeiteten Kompetenzbilanzen für die Verwendung in unterschiedlichen Handlungskontexten dar – sie ist Mittel zum Zweck der Selbstpositionierung von Migrant/innen auf dem hiesigen Arbeitsmarkt.

Das Kompetenz-Entwicklungs-System KES umfasst die Methodik zur Kompetenzerfassung und -dokumentation im Prozess der Arbeit. KES umfasst die Erhebung und Bearbeitung aller biographisch erworbenen und der

in den aktuellen Tätigkeitsbereichen sichtbaren Kompetenzen.

Die Kompetenzerfassung stützt sich im Wesentlichen auf zwei Herangehensweisen: Fremd- und Selbsteinschätzung (die Fremdeinschätzung durch Beobachtung und Kompetenzerfassung im Prozess der Arbeit, die Selbsteinschätzung durch Reflexion) und einen kompetenzbiographischen Zugang (durch Interview und Selbstreflexion), der die Aufarbeitung der biographisch erworbenen Kompetenzen ermöglicht.

Die als Bestandteil des Kompetenz-Entwicklungs-Systems entwickelten Qualifizierungsangebote (Fremdeinschätzung / Selbsteinschätzung/ kompetenzbiographischer Ansatz) bieten wir noch heute an. Während die Schulungsangebote für Fachkräfte die Schwerpunkte interkulturelle Sensibilisierung/interkulturelles Training, Beobachten sowie den kompetenzbiographischen Ansatz umfassen, beziehen sich die für Migrant/innen konzipierten Angebote auf Fragen rund um das Thema „Was sind Kompetenzen? Wie erkenne ich meine Kompetenzen, wie kann ich sie beschreiben? Welche Kompetenzen werden von mir auf dem Arbeitsmarkt gefordert?“ und natürlich zum Umgang mit Fremd- und Selbsteinschätzung.

Bereits während der Projektlaufzeit (2005-2007) sowie nach Projektabschluss hat das Produkt KEN viel positive Resonanz in Migrations-Fachkreisen bekommen.

### **Wandel-Innovation-Botschaft**

Als das SGB II in Kraft trat, sagten wir voraus, dass neue Forderungen an die Betriebe der Sozialwirtschaft gestellt werden, um mehr und noch qualitativ bessere Eingliederungsangebote für Benachteiligte bereitzustellen. Bisherige Strukturen reichten aus unserer Sicht nicht aus und langbewährte Rahmenbedingungen verloren zum Teil ihre Gültigkeit. Wir sind damals davon ausgegangen, dass die Anzahl von Hilfebedürftigen dazu führen würde, dass der Auftrag Integration massiv ausgebaut werden müsste. Zur nachhaltigen Umset-

zung dieses Auftrags forderten wir die soziale und wirtschaftliche Nutzung geförderter Beschäftigung neu zu unterlegen - ein Paradigmenwechsel tat Not! Neue Betätigungsfelder mussten eruiert, Betriebe reorganisiert, neue Rechtsrahmen und Netzwerke entwickelt und wirtschaftlicher Nutzen in Kooperation mit der allgemeinen Wirtschaft generiert werden. Mit unserem zweiten EQUAL-Projekt Wandel-Innovation-Botschaft wollten wir diesen Prozess anstoßen und unterstützen.

Hierzu identifizierten wir 7 Schritte, die dann die Teilprojekten bildeten. Die bag arbeit übernahm die strategische Koordinierung, um die Ergebnisse und Teilergebnisse dem Gesamt-Paradigmenwechsel zuzuordnen.

7 Schritte:

1) Entwicklung einer Methodik zur Eruiierung neuer Betätigungsfelder (Teilprojekt Innovation in der Sozialwirtschaft, Werkstatt Frankfurt e.V.)

2) Umstellung der betrieblichen Organisation auf die neuen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und neue Ausrichtung geförderter Beschäftigung (Teilprojekt Gestaltung & Empowerment, GOAB gGmbH)

3) Professionalisierung der Betriebe und Verknüpfung der Tätigkeitsbereiche mit der allgemeinen Wirtschaft (Teilprojekt Generierung wirtschaftlicher Integration, Integral gGmbH)

4) Aufbau regionaler Verbünde (Teilprojekt Regionale Beschäftigungsnetze, QAD GmbH)

5) Unterstützung des Einzelnen und der Betriebe, neuartige Beschäftigungsperspektiven zu erkennen und zu koordinieren (Teilprojekt Patchwork, Netz NRW e.V.)

6) Aktivierung und Gestaltung von Perspektiven für besonders Benachteiligte (Teilprojekt Grundsicherung, Neue Arbeit e.V. Meinigen)

7) Transfer des Paradigmenwechsels in die Betriebe, die Öffentlichkeit und die Politik (Teilprojekt Image, Netz NRW e.V.). Im Laufe der Aufbauphase kamen

zwei neue Schritte durch die Teilprojekte Neue Qualifikationen in der Gesundheits- und Sozialwirtschaft und neue Jobs in der Gesundheits- und Sozialwirtschaft (Teilprojekträger Caritasverband Köln) dazu.

Das Projekt brachte eine Vielzahl an neuen Produkten und Impulsen für die Beschäftigungsunternehmen. Insbesondere zu nennen sind Recycling-Trainer Online, Arbeitsvorbereitungsmappe für den Garten- und Landschaftsbau, Qualitätshandbuch Sozialberatung und Arbeitsvermittlung, Fortbildungskonzept für Anleiter/innen, Toolbox zur Organisationsentwicklung: Business-Instrumente für sozialwirtschaftliche Strukturen (BISS), Handlungsleitfaden zur Verbesserung der persönlichen Ressourcen und Kompetenzen der Kunden für eine nachhaltige Integration, Toolbox zur Steigerung der Selbstmanagementkompetenz, Online Image Koffer - Von der Idee zur Markteinführung, Leitfaden für Sozialunternehmen, Innovationszirkel, ein Modell zur innovativen Vernetzung, Social Scoring, Kennzahlen sozialer Arbeit, Handbuch Strategieansätze zur Vernetzung mit einem Handlungsleitfaden für eine Entwicklung sozialwirtschaftlicher Aktivitäten einer Region, Businessplan zur Einrichtung eines Dienstleistungspools für 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Handreichung Vermittlung aus Arbeitsgelegenheiten in Arbeit oder Ausbildung, Qualifizierungsmodul Grundlagen der Altenpflege – soziale Betreuung älterer Menschen, Qualifizierungsbaustein soziale Betreuung älterer Menschen – 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Weiterbildung Home-Management: Seniorenbegleiter – 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Qualifizierungsbausteine Grundlagen des Verkaufs und Qualifizierungsbaukasten Hausmeisterassistenz.

### **Hoffnung Alter**

Das Projekt „Hoffnung Alter“ gab uns die Möglichkeit im ausgewählten Handlungsfeld Pflege und Gesundheit mit Praxispartnern Beispiele für die Integration Älterer zu entwickeln und zu begleiten. Im Rahmen der 10. Innopunkt-Kampagne des

Landes Brandenburg „Mehr Chancen für ältere Fachkräfte“ wurde das Projekt vom Förderverein Akademie 2. Lebenshälfte im Land Brandenburg e.V. und den Partnern: IQ-Intelligente Qualität, IQ-Consult gGmbH und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e.V. durchgeführt. Konkret sind im Rahmen des Projekts vielfältige Ansätze geschaffen worden, die eine langfristige Sicherung des erfolgreichen Verbleibs Älterer in den Unternehmen der Gesundheits- und Pflegebranche versprechen können.

Die Erfahrungen im Modellprojekt bestärkten unsere Auffassung, dass diese Anforderungen nur in Einheit von individuellen Bedingungen (gesundheitliche und persönliche Situation, Berufs- und Lernbiografie, Teamorientierung) und den Bedingungen des Unternehmens (Unternehmensleitbild, regionale Einbindung, Ausgestaltung der Arbeitsaufgaben und -bedingungen, altersorientierte Personalpolitik) realisiert werden können.

Der Ansatz des Projektes war „Gute Beispiele“ systematisch entwickeln zu helfen, Prozesse zu dokumentieren und in der Öffentlichkeit Wahrnehmung, Transfer und Vernetzung zu erreichen. Wesentliche Leistungsansätze des Projekts bezogen sich auf:

- vorausschauende Analysen der Alterstruktur in lokalen Räumen und Unternehmen und der Ableitung von Handlungserfordernissen
- Erfassung von Kompetenzen älterer arbeitsfähiger Menschen in den Regionen
- Analyse von Leistungs- und Gefährdungspotenzialen in den Unternehmen und Ableitung von Konsequenzen der Kompetenzentwicklung Älterer zu Erhalt und Entwicklung ihrer Beschäftigungsfähigkeit
- Alters- und altersgerechte Personal- und Organisationsentwicklung
- Strategien der Personalrekrutierung und Möglichkeiten einer alter(n)sgerichteten Arbeitsgestaltung

#### ■ Rekrutierung älterer Fachkräfte

Die Ansätze, auf deren Basis alter(n)sgerichtete Personalentwicklung in Unternehmen der Pflege stattfinden und abgegrenzt werden können, spiegeln sich in vier inhaltlichen Handlungsfeldern wider:

1. Kompetenz- und Wissensentwicklung ältere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und Nutzung von Erfahrungswissen älterer Fachkräfte
2. Altersgerechte Arbeitsorganisation und Arbeitsgestaltung (betriebliche Gesundheitsförderung und Arbeitsbewältigung eingeschlossen)
3. Erhalt und Entwicklung von Qualifikationen und Kompetenzen in und zwischen betrieblichen Altersgruppen
4. Integration von älteren arbeitssuchenden Fachkräften durch Erweiterung der Rekrutierungsstrategien der Unternehmen und weitere Maßnahmen, wie Anpassung der Arbeitsorganisation, passgenaue, arbeitsplatzrelevante Qualifizierung, Gesundheitsförderung etc.

So entstanden die folgenden Werkzeuge, die interessierten Personalverantwortlichen aber auch Berater/innen und Trainer/innen den Einstieg in eine alter(n)sgerichtete Personalentwicklung erleichtern sollen: Handlungsleitfäden zum Arbeitsbewältigungindex (ABI) für Kleinbetriebe, Curriculum für das Coaching von Führungskräften, Curriculum Train the Trainer.

#### **Second Life**

Unsere Fachgruppe Arbeit und Umwelt erschließt seit einiger Zeit systematisch das Feld des qualitativ hochwertigen Recyclings und besonders der Wiederverwendung gebrauchter Güter. Eine besondere Rolle spielen traditionell gebrauchte Elektro-Geräte. In diesem Bereich gehört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neben den Werkstätten für Behinderte zu den ersten, die sich mit diesem Bereich in den 80er Jah-

ren befassten und diesen nachhaltig entwickelt haben. Nach dem großen Erfolg des EQUAL-Projekts Second Chance in den Jahren 2002-2005 haben wir zwei neue Projekte im Umwelt- und Wiederverwertungsbereich aufgenommen. Mit dem Projekt Second Life wollen wir bis 2010 gemeinsam mit der Deutschen Umwelthilfe Qualitätskriterien für die Wiederverwendung gebrauchter E-Geräte untersuchen und festlegen und die Grundlagen für die Einführung eines Qualitätslabels schaffen. Ziele sind dabei, in zunächst sozialwirtschaftliche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eine Grundlage für hochwertige Qualifizierung sozial benachteiligter Gruppen und in der Folge einen Austausch für mehr Verbrauchervertrauen in gebrauchte Elektro-Geräte zu schaffen und eine Steigerung des Absatzes dieser Geräte zu erreichen.

Darüber hinaus gilt ein wichtiger Aspekt des Projektes der Sicherung und Ausweitung von Beschaffungswegen für wiederverwendbare Geräte unter den gegebenen Bedingungen des ElektroG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durch soziale Unternehmen und die Relevanz von Wiederverwendung als aktiver Beitrag zum Klimaschutz.

Während der Projektlaufzeit wird ein Netzwerk aus Verwertern, Wiederverwendern, Verbänden, Ämtern und wissenschaftlichen Institutionen aufgebaut werden, dass das Thema Wiederverwendung am Beispiel gebrauchter E-Geräte nachhaltig in das öffentliche Bewusstsein tragen kann.

#### **Übernahme der Präsidentschaft in ENSIE 2007 - 2009**

Turnusgemäß haben wir auch in den Jahren 2007-2009 die Präsidentschaft in unserem europäischen Verband ENSIE übernommen. In dieser Zeit konnten wir gemeinsam mit den anderen Mitgliedern neue Akzente in die Arbeit einbringen und das Thema Qualitätsmanagement und Qualität der Integrationsarbeit ansiedeln. Die Dialoge mit einer Vielzahl von euro-

päischen Gremi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wurden aufgenommen und so konnten wir gezielt an ihren Konsultationsprozessen teilnehmen, z.B. europäischen Wirtschafts- & Sozialausschuss, Generaldirektionswettbewerb, Generaldirektion Beschäftigung, Soziales und Chancengleichheit, der Generaldirektion Steuer und Zollunion und der parlamentarischen Intergruppe für die Sozialwirtschaft. Ein Höhepunkt war die Partizipation an der Analys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 & Sozialausschusses zur sozialen Innovation in Europa und die Entwicklung nationaler und regionaler Richtlinien hierfür.

**AuditorInnen Pool**

Im Herbst 2007 hat die bag arbeit mit Unterstützung durch Intelligente Qualität, Dr. Gerald Graubner, einen Auditor/innenpool ins Leben gerufen. Erfahrene Qualitätsmanagement-Bauftragte und Geschäftsführer/innen von bag-Mitgliedsunternehmen gehören dem Auditor/innenpool an und geben ihr fachliches Wissen darüber, wie QM-Prozesse i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zu gestalten sind, im Rahmen von Audits weiter. Ziel des Auditteams ist es, den Verbandsmitgliedern bei ihrer Vorbereitung auf die Erstzertifizierung, das nächste Überwachungsaudit bzw. die Re-Zertifizierung nach DIN EN ISO und/oder AZWV zu helfen und sie bei der Verbesserung ihrer Management-Systeme zu unterstützen.

Unsere Unternehmen stellen sich viele Fragen am Ende der Einführung eines Qualitätsmanagement-Systems: „Haben wir alles richtig gemacht?“, „Sind unsere Ergebnisse normgerecht?“, „Müssen wir noch nachbessern?“, „Werden wir die Zertifizierung schaffen?“ Um mehr Orientierung und größere Sicherheit zu erlangen, können sie sich deshalb des Auditor/innenpools der bag arbeit bedienen.

Mit dem Pool ist quasi eine neue Fachgruppe im Verband entstanden, die bei der gezielten Gestaltung von Tagungsinhalten, Qualifizierungs-

bausteinen und Seminaren ihr praxisorientierten Sichtweise einbringt und die theoretische Grundlage ergänzt.

**Die Jahrestagungen**

Die Jahrestagungen sind in den 90er Jahren bereits zum jährlichen verbandlichen Höhepunkt geworden, wo unser Sektor die Chance hat sich fachlich untereinander und mit der Politik und der Fachwissenschaft auszutauschen.

Elf Monate nach Inkrafttreten des SGB II haben wir während unserer Jahrestagung am 14. und 15.11.2005 in Erfurt eine erste Bilanz gezogen. Wie sich Beschäftigungsförderung und soziale Begleitstrukturen in der neuen regionalen Arbeitsmarktpolitik umsetzen lassen, darüber diskutierten mehr als 230 Vertreter/innen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gemeinsam mit Fachleuten aus Politik, Wissenschaft, Verwaltung und Verbänden. Es wurden sowohl kommunale Umsetzungsmodelle des SGB II als auch ARGE-Varianten für die Kooperation mit den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vor Ort vorgestellt.

Wie künftig Langzeitarbeitslose aktiv integriert werden können, diskutierten wir mit mehr als 170 Vertreter/innen von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unternehmen und mit Expertinnen und Experten aus Politik, Wissenschaft und Verwaltung während der Jahrestagung der bag arbeit am 6. und 7.11.2006 im Ostseebad Binz auf Rügen. Ebenfalls präsentierten wir Integrationskonzepte aus Schweden, Polen und Belgien. Die Grundsatzrede hielt Arndt Schwendy von der BAG Integrationsfirmen zum

Thema „Der gesellschaftliche Wert von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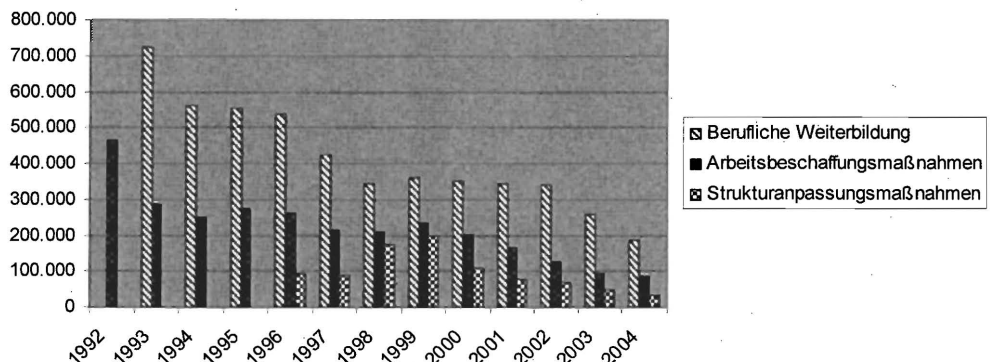
Für die Jahrestagung 2007 kehrten wir nach Berlin zurück und stellten Vertreter/innen aller Bundestagfraktionen in einer Podiumsdiskussion die Frage wie öffentlich geförderte Beschäftigung auf die aktuellen Herausforderungen reagieren sollte. Zum Tagungsthema Nachhaltige Integrationsformen – Integration unter verbesserter Konjunktur konnten wir Dr. Schmachtenberg vom BMAS sowie Prof. Dr. Sell von der Fachhochschule Koblenz als Referenten gewinnen. Erneut kamen über 170 Teilnehmer/innen aus dem gesamten Bundesgebiet zur Jahrestagung.

Mitten im gesetzgeberischen Prozess für die Neuausricht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fand die Jahrestagung 2008 statt. Die Grundsatzrede hielt Staatssekretär Detlef Scheele vom BMAS. Mit dem Gesetzesvorhaben konnten wir uns ebenfalls mit Vertreter/innen der Bundestagsfraktionen in einer Podiumsdiskussion auseinandersetzen, bevor Detailfragestellungen mit einzelnen Referenten im Plenum und in Workshops behandelt wurden. Über 300 Teilnehmer/innen konnten wir in Berlin begrüßen!

**2009 und weiter!**

Zwischen 2005 und 2008 ist der Verband weiterhin gewachsen. Waren es Ende 2005 333 Mitgliedsunternehmen wurden daraus 395 zum Jubiläumstermin im Januar 2009. In 2006 kam der Mecklenburg-Vorpommerscher Verband der Arbeitsförderungs-, Beschäftigungs- und Strukturentwicklungsgesellschaften

**TeilnehmerInnen - Jahresdurchschnitt**



als Landesverband neu hinzu. Seit unserem Bestehen ist die bag arbeit von 19 Mitgliedsunternehmen bis auf 395 angewachsen mit 13 assoziierten Landesverbänden.

Viel ist in den 20 Jahren geschafft worden und unzählige Mitstreiter/innen haben hierzu beigetragen. Wir arbeiten in einem Sektor, von dessen Akteuren extrem viel Flexibilität gefordert wird sowie viel Anpassungsbereitschaft an sich stets verändernde Rahmenbedingungen und Regelungen und eine hohe Risikobereitschaft. Ebenfalls gehörte für sie die gute Vernetzung schon immer zum betrieblichen Muss.

Im Jubiläumsjahr stehen wir wieder vor einem erheblichen Umbau der Verwaltungsstrukturen für das SGB II. Ende 2007 urteilt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ss die jetzige Konstruktion der ARGE nicht verfassungskonform ist. Als Verband forderten wir die Politik bereits Anfang 2008 auf, eine Lösung zu erarbeiten, die die folgenden Grundsätze verfolgt:

1. Hilfestellung aus einer Hand, d.h. die Regelleistungen und Kosten der Unterkunft sind zwingend aus einer Hand zu bearbeiten und in einem Bescheid zu bewilligen.
2. Hilfeplanung aus einer Hand. Dies bedeutet in erster Linie die notwendige Verknüpfung arbeitsmarktlischer und sozialer Dienstleistungen in einer einheitlichen Hilfeplanung.
3. Die Betroffenen haben einen persönlichen Ansprechpartner sowohl für ihren Leistungsanspruch, der Vermittlung in Arbeit als auch für die integrativen Instrumente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Nur so ist eine passgenaue Eingliederung für die betroffenen Langzeitarbeitslosen oder arbeitslosen Jugendlichen umsetzbar.
4. Bund und Kommune sind gemeinsam für die Finanzierung und Etablierung in ihren jeweiligen Zuständigkeiten verant-

wortlich. Der Bund entwickelt und steuert die globalen Ziele. Die Kommune ist der Garant für das Herunterbrechen der zentralen Zielvorstellungen in lokale flexible Instrumente, die den örtlichen Bedingungen der arbeitslosen Menschen und des Arbeitsmarktes gerecht werden.

5. Eine gesetzliche Regelung ist notwendig und sinnvoll. Die Organisation der Umsetzung des SGB II für 6 bis 7 Millionen Bundesbürger muss verlässlich und dauerhaft geregelt werden. Dies kann nicht untergesetzlich garantiert werden.

In dieser 20jährigen Zeitspanne ist die Arbeitslosigkeit von 2 Mio. auf über 3 Mio. Menschen gewachsen. Auf Grund der Wiedervereinigung und der Systemreform (Zusammenlegung Arbeitslosenhilfe und BSHG) lassen sich diese Zahlen nicht wirklich vergleichen, weil mehr Menschen im Arbeitslosensystem betreut werden und Neuregelungen in der Zählweise haben dazu geführt, dass sich die statistische Definition von arbeitslos geändert hat (seit 2009 gelten nach § 16 Absatz 2 SGB III alle Teilnehmer/innen an Maßnahmen der aktiven Arbeitsmarktpolitik nicht als arbeitslos). Nichts desto trotz ist die strukturelle Langzeitarbeitslosigkeit transparenter geworden und der politische Wille, alternative Lösungen zur Beschäftigung für diese Menschen zu finden, wächst zunehmend.

Nicht nur die bag arbeit feiert 20 Jahre in diesem Jahr, sondern viele Mitgliedsunternehmen begehen 15, 20 und 25jährige Jubiläen. Dies zeigt auf der einen Seite eine hohe Stabilität im Sektor (wir sind keine Eintagsfliegen) und auf der anderen demonstriert dies die Fähigkeit der Unternehmen und der Beschäftigten, Strukturen schnell aber solide auf die sich ständig ändernden Rahmenbedingungen der Arbeitsmarktpolitik umzustellen.

Die Herausforderungen der Zukunft für die fachliche Verbandsarbeit sind vielfältig. Durch die fließende

Reformpolitik sind wir häufig mit punktuellen Problemen konfrontiert, so dass eine Konzentration auf nachhaltige Entwicklungsthemen manchmal unmöglich erscheint. Folgendes bleibt zu tun:

- Veränderungsprozesse begleiten und die fachliche Weiterentwicklung der Umsetzung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 in den Mittelpunkt stellen und dies vor dem Hintergrund einer fließenden arbeitsmarktpolitischen Reform
- Die Organisation von Teilhabe für am Arbeitsmarkt benachteiligte und ausgegrenzte Menschen während und nach der Konjunkturkrise
- Ausbau von Synergieeffekten mit anderen Akteuren und Verbänden, insbesondere Wirtschaftsverbänden – Lernen von- und miteinander, Kooperieren miteinander, Qualität miteinander absichern
- Entwicklung neuer fachlicher Unterstützungswerkzeuge für die Mitgliedsunternehmen wie z.B. ein interkulturelles Audit für die Integrationsarbeit; die Begleitung der Entwicklung des Deutschen Qualifikationsrahmens (DQR) und der Implikationen und Chancen für unsere Zielgruppen sowie für die Entwicklung neuartiger Integrationssysteme

Anlässlich der 20-Jahr-Feier im Sommer 2009 dankte uns der Arbeitsminister Olaf Scholz für die kritische und konstruktive Begleitung arbeitsmarktpolitischer Entwicklungen in den zurückliegenden 20 Jahren. Mit hoher Fachkompetenz habe der Verband bei der Ausgestaltung arbeitsmarktpolitischer Konzeptionen und Programme mitgewirkt.

Und er hatte recht, genau so waren die 20 Jahre!

Truda Ann Smith  
Geschäftsführerin  
bag arbeit e.V.  
Tel. 030 / 28 30 58 14  
smith@bagarbeit.de  
www.bagarbeit.de

문서 번호 54

독일통일 20년 - 동서독지역의 직업교육

2009년 10월

담당자 / 기관: 독일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전문 매거진에 발표된 독일의 직업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관해 정리한 논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연방의회(Bundestag)가 1969년에 최초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을 제정하였고, 1990년 7월 19일에 동독의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가 이 법을 동독에서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동독과 서독에서는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를 졸업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았었다. 동독과 서독의 직업교육 체계를 비교해 보면 동독에서는 직업교육이 근로인력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드러난다. 국가 또는 사업체가 정하는 수요에 따라 직업훈련생(Auszubildende) 자리가 배정되었다. 직업학교(Betriebsberufsschule)의 목적은 직업훈련생을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성숙하고 고도로 숙련된, 계급의식을 갖춘 전문노동자”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통일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에게 돌아갔고, 모든 직업학교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게 되었다. 구서독지역 청소년에게는 구동독지역에서도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구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고 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는 약 7,000개의 직업훈련 자리가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출처: Magazin für Soziales, Familie und Bildung







Nr. 080 10/2009

Die Bundesregierung informiert.




4 | 14

## Berufsbildung Ost und West



Foto: picture-alliance/ZB  
Dual in Ost und West



Seit 1869 muss der Lehrherr "sich angelegen sein lassen, den Lehrling durch Beschäftigung und Anweisung zum tüchtigen Gesellen auszubilden. Er darf dem Lehrling die hierzu erforderliche Zeit und Gelegenheit durch Verwendung zu anderen Dienstleistungen nicht entziehen." So steht es in der Gewerbeordnung des Norddeutschen Bundes, die dann zwei Jahre später vom Deutschen Reich übernommen wurde.

Auch in die Schule mussten die Lehrlinge, wenn auch erst nur in Feiertagsschulen. Erst 1938 wurden die Berufsschulen zur Pflicht. Damit liegen die Wurzeln für das duale Ausbildungssystem, um das uns viele Länder beneiden, weit in der Vergangenheit.

### Dual in Ost und West

Es liegt auf der Hand, dass in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Schulen auch ideologisch auf den Nachwuchs einwirkten. Das galt später in der DDR ebenso für die Schulen wie auch für die gleichgeschalteten Betriebe. Das Berufliche stand aber naturgemäß unabhängig vom jeweiligen politischen System im Vordergrund. Jede Gesellschaft braucht gut ausgebildete Fachkräfte.

So basierten die Berufsbildungssysteme beider deutscher Staaten auf der traditionellen Ausbildung an zwei Lernorten, dem schulischen für die theoretischen Inhalte und dem betrieblichen für die Praxis. Bis es jedoch zu einer einheitlichen gesetzlichen Regelung der Berufsbildung kam, vergingen viele Jahre.

Erst 1969 verabschiedete der Deutsche Bundestag das Berufsbildungsgesetz, das bis heute mit einigen Aktualisierungen die berufliche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regelt. Noch die letzte DDR-Volkskammer übernahm es am 19. Juli 1990 für die DDR. Eines war beiden deutschen Staaten gemeinsam: Weit über die Hälfte der Jugendlichen begannen nach Ende der allgemeinbildenden Schule eine Berufsausbildung.

### Differenziertes System

Der größte Teil der Jugendlichen der DDR begann nach der 10. Klasse der Polytechnischen Oberschule eine Ausbildung im DDR-Berufsbildungssystem. Die Chance, das Abitur an der weiterführenden Erweiterten Oberschule abzulegen, war neben guten Leistungen stark an die Linientreue gebunden.

Dabei war das Berufsbildungssystem differenziert. Die Facharbeiterausbildung nach

10 Jahren Schulbesuch dauerte zwei Jahre. Daneben gab es 63 Ausbildungsberufe für Schulabgänger der 8. Klassen. Die Ausbildung war auf das geringere Niveau der Eignungsvoraussetzungen zugeschnitten und dauerte zweieinhalb bis drei Jahre. Ein weiterer Bildungsweg war die dreijährig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86 Berufe standen für diesen Weg zur Verfügung.

Im Schuljahr 1988/1989 gingen knapp 13 Prozent der Schulentlassenen der 10. Klassen an die Erweiterte Oberschule, um dort das Abitur abzulegen. Gut 6 Prozent wurden für eine "Berufsausbildung mit Abitur" zugelassen. Über 10 Prozent gingen an Fachschulen. Der überwiegende Teil von gut 70 Prozent begann eine Ausbildung zum Facharbeiter.

936 betriebliche Berufsschulen deckten den theoretischen und praktischen Teil der Ausbildung für den größten Teil der Auszubildenden ab. Eine organisatorische und rechtliche Trennung zwischen betrieblicher und schulischer Ausbildung bestand somit nicht. Die Schule war Teil des Betriebes und auch für die Lehrwerkstätten verantwortlich. Da große Betriebe grundsätzlich staatlich waren, bestanden zwar Merkmale einer dualen Ausbildung im Sinne getrennter berufstheoretischer und berufspraktischer Ausbildungen. Anders als im Westen war aber der Staat für beide Teile zuständig.

Es gab auch einige kommunale Berufsschulen, die sich der Auszubildenden kleinerer Betriebe annahmen. Meist jedoch besuchten auch sie die Betriebsberufsschulen. Jeder dritte Auszubildende war in Internaten untergebracht, da die Ausbildung nicht in Wohnortnähe erfolgte.

Daraus ergaben sich gravierende Unterschiede zur Bundesrepublik. Die Berufsausbildung war Teil der Arbeitskräfteplanung der DDR. Entsprechend konnte rein nach dem staatlich oder betrieblich definierten Bedarf die Zulassung zu den Berufen geregelt werden. Gleichzeitig diente die Betriebsberufsschule dazu, die Auszubildenden politisch-ideologisch zu einem "allseitig entwickelten, hochqualifizierten und klassenbewussten Facharbeiter" zu erziehen.

### **Lange Übergangszeit**

Nach der Wende ging die Verantwortung für die Ausbildung wie im Westen an die Privatwirtschaft. Gleichzeitig kamen sämtliche Berufsschulen in kommunale Trägerschaft. So war sehr schnell die Voraussetzung zur vollständigen Übernahme des westdeutschen dualen Berufsbildungssystems gegeben.

Die Umstellung wäre eigentlich ganz einfach gewesen, hätten sich nicht die meisten Betriebe in einem absolut desolaten Zustand befunden. So begann eine Wanderung der jungen Menschen in den Westen, um hier eine Ausbildung zu absolvieren. In den neuen Ländern entstanden Einrichtungen, die außerbetriebliche Berufsausbildungen anboten. Bis heute läuft das Ausbildungsprogramm Ost, wenn auch in geringerem Umfang als unmittelbar nach der Wiedervereinigung. Waren es 2001 noch 16.000 geförderte Lehrstellen, so sind es heute nur noch 7.000.

Inzwischen beginnt die Situation, nicht zuletzt wegen des demografischen Wandels, sich umzukehren: Westdeutschen Jugendlichen wird geraten, auch in den neuen Ländern nach einem Ausbildungsplatz zu suchen. Der wirtschaftliche Aufschwung einiger Branchen Ostdeutschlands und die sich extrem verringere Zahl ostdeutscher Schulabgänger führen zu attraktiven Perspektiven für junge Menschen aus ganz Deutschland.

문서 번호 55

노동 연방연구회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와의 인터뷰

2010 년 9 월 30 일

담당자 / 기관: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

내용:

이 문서는 엘렌 루트 슈나이더(Ellen-Ruth Schneider) 독일노동실무협회 회장과의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특히 독일통일에 있어 지식전이(Wissenstransfer)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없었다. 동독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살았다. 변혁 이후 이러한 느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사회조합(Sozialverbänden)들이 운영주체를 맡고 연방 노동사회부와의 협력 하에서 “독일노동실무협회 (BAG)”가 설립되었고 베를린에 동-서간 연락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 업무보고서 기록들도 취합되었다. 사회조합들도 구동독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통일 초기에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 할 공간이나 숙소, 기계설비와 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 구동독 사람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공동체의 자원 (사회기금)이 주어졌고, 그외에도 연방사회구조법 및 노동진흥법(AFG)에 근거한 자원, 예를 들어 임금비용보조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정이 지원되었다. 그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초기에는 구동독지역의 지자체들이 무엇이 지자체가 져야할 의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흔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경우 노동조합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출처:



**Protokoll eines Gesprächs mit Frau Ellen-Ruth Schneider**

**Berlin, 30.09.2010**

Frau **Ellen-Ruth Schneider** ist Geschäftsführerin der Bag e.V. und äußerte sich zum Thema Wissenstransfer.

## **Gesprächsinhalt:**

In der DDR gab es keine Sozialarbeiter. Zwar existierte die Volkssolidarität; diese hat aber nicht nach Kosten-Nutzen-Gesichtspunkten gearbeitet und war ideologisch vorbelastet und daher im weiteren Prozess in den 1990er Jahren zunächst von geringer Bedeutung.\* Die Menschen in der DDR hatten das Gefühl, dass sie (sinnvoll) beschäftigt waren. Nach der Wende schwand dieses Gefühl plötzlich; 1992 hatte die Arbeitslosigkeit rasant zugenommen. Es gab große Betriebe in Ostdeutschland ohne Überlebenschance und eine neue Massenarbeitslosigkeit, die in Westdeutschland nicht in dem Maße existierte. Es war nicht zuletzt angesichts ihres Wählerpotentials im Interesse der politisch Verantwortlichen, sich der Arbeitslosen anzunehmen.

Nach der formellen Wiedervereinigung im Oktober 1990 ging es auch um Instrumente für Arbeitsmarkt und Beschäftigung; bereits im Westen praktizierte Verfahren sollten, in angepasster Form, ebenfalls im Osten Deutschlands zur Anwendung kommen. Unter der Trägerschaft von Sozialverbänden wurde im Zusammenwirken mit dem "Arbeitsministerium" eine "Bundesarbeitsgemeinschaft Arbeit" geschaffen, mit einem Koordinierungsbüro Ost-West in Berlin, anfangs mit vier Mitarbeitern. Die Trägerschaft übernahmen hauptsächlich die "Caritas", die "Arbeiterwohlfahrt" und ähnliche Einrichtungen. Das Büro befindet sich jetzt in der Brunnenstraße. Hier sind die Geschäftsberichte archiviert; sie sind öffentlich zugänglich. Die Berichte der Gründungsjahre sollten insbesondere von Interesse sein. Wenn die Geschäftsberichte nicht mehr in der Geschäftsstelle erhältlich sind, sollten sie im Arbeitsministerium vorhanden sein.

Sozialverbände eröffneten ebenfalls Büro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Für Vor-Ort-Seminare waren anfangs kaum Tagungsräume, Unterkünfte, Technik oder auch Mittel vorhanden. Fünf große Sozialverbände, darunter die "Caritas", setzen ihre arbeitspolitische Gewichtung auf sozial schwache Leute sowie Behinderte und Langzeitarbeitslose; auch wurden hoch, aber falsch qualifizierte DDR-Bürger neu zukunftsorientiert beschult und auf dem Arbeitsmarkt eingesetzt. Meist waren es kirchliche Institutionen bzw. Institutionen mit Bindungen zur Kirche. Die Kirchen waren also von Anfang an involviert. Zunächst wurde ein sozialpolitischer Ansatz verfolgt; dieser verlor aber gegenüber dem arbeitspolitischen an Bedeutung. Das westdeutsche System hatte sich in den alten Ländern bewährt und sollte in den neuen Ländern eingeführt werden. Die Qualifizierungsmaßnahmen zielten auf den ersten Arbeitsmarkt ab; es ging um Schlüsselqualifikationen. Ferner spielte die strukturelle Arbeitslosigkeit eine Rolle; z.B. waren Frauen eine besondere Zielgruppe. Auch psychologische Betreuung war erforderlich. Mit diesen Maßnahmen sollte eine Reintegration in den Arbeitsprozess und in die Gesellschaft erreicht werden.

Bei der Beschäftigung auf dem Arbeitsmarkt standen für DDR-Bürger Mittel der EU zur Verfügung ("Sozialfonds"), außerdem Mittel aus dem Bundessozialhilfegesetz (Paragraph: Hilfe zur Arbeit) und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u.a. Lohnkostenzuschüsse, und es gab

---

\* Die Volkssolidarität ist inzwischen einer der großen Sozial- und Wohlfahrtsverbände in Deutschland und nach wie vor der größte in Ostdeutschland.

Fördermittel auf kommunaler Ebene. Die Kommunen haben das Sozialhilfegesetz in Anspruch genommen - dies waren also keine Bundesmittel. Es gilt das Subsidiaritätsprinzip: Die Kommune ist unmittelbar zuständig - erst dann der Bund. Die Kommunen hatten deswegen immense, nicht kalkulierbare Kosten. Vom Bund kam das Arbeitslosengeld. Wenn jemand für mindestens ein Jahr in Beschäftigung war, hatte er/sie wieder Anspruch auf Arbeitslosenhilfe; dies entlastete die Kommunen. Es hatte aber auch zur Folge, dass viele Personen eben nur ein Jahr lang beschäftigt waren. Oft wussten ostdeutsche Kommunen nicht, was kommunale Aufgaben sind. In vielen Fällen haben die 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ötv) und andere Gewerkschaften in diesem Zusammenhang helfen können.

In den Kommunen bzw. bei kommunalen Beschäftigungsträgern kamen ABM-Kräfte zum Einsatz. Sie waren z.B. an der Restaurierung von alten Burgen, bei Kirchenchroniken, bei der Restaurierung von Naturschutzparks oder bei der Einrichtung von Radwegen beteiligt. Dadurch erhielten die ABM-Kräfte oft neue Qualifikationen; nach dem Ablauf der ABM folgte jedoch keine weitere Verwendung. Die Situation war problematisch insbesondere für jene, die nicht nach Westdeutschland gingen, sondern in Ostdeutschland blieben.

Die Beschäftigungsgesellschaften (ABS) erwiesen sich als zu groß und hatten keine Überlebenschance. Kleinere Institutionen mit einem differenzierteren und strukturellen Vorgehen waren notwendig. In den Bildungsmaßnahmen für Sozialmanager (Geschäftsführer der Betriebe) und andere ging es u.a. darum, Wissen zu vermitteln und das "Know How", wie Fördermittel beantragt und Gesetze genutzt werden können. (EU, Bundesländer, andere Zuwendungsgeber). In den meisten Fällen war es so: Geld vom Bund für Arbeit auf Gemeindeebene.

Einem Konflikt galt es ständig entgegenzuwirken: Wie fördert man Sozialbetriebe, ohne dass dies eine Wettbewerbsverzerrung schafft? Wichtig war eine Moderation, von Berlin aus geleitet, die zwischen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Interessen vermittelte - für ein gegenseitiges Kennenlernen und Berichten und ein gemeinsames Erörtern. Es entstanden neue Arbeitsbereiche, teilweise in Konkurrenz zur "etablierten" Wirtschaft; um Konflikte zu vermeiden, galt das Kriterium der Gemeinnützigkeit. Die Sozialbetriebe sollten also Aufgaben übernehmen, für die die Kommunen kaum Mittel hatten, und von Sozialbetrieben hergestellte Produkte konnten z.B. auf Wochenmärkten angeboten werden, nicht aber auf dem regulären Markt, um eine Konkurrenzsituation zu vermeiden. Wenn Beschäftigungsbetriebe normal konkurrieren wollten, ist die Förderung weggefallen.

Es bestand auch bei oft hoch qualifizierten Mitarbeitern ein eklatanter Mangel an Kenntnissen über Marktorientierung und wirtschaftlichem Denken. Für viele war es neu und schwierig, dass die Verwendung der Mittel gerechtfertigt und darüber Bericht erstattet werden musste. Zuvor war der Gedanke: Wenn es gesellschaftlich notwendig ist, dann gibt es dafür quasi automatisch Gelder; die Verwendung der Gelder ist unstrittig.

Notwendig war die Ausbildung zum "Sozialmanager", also zum spezialisierten Sozialarbeiter bzw. "Arbeitsanleiter". Wichtig waren zukunftsorientierte Qualifikationen. Die

Sozialmanager hatten auf technische Fertigkeiten und Arbeitspläne, aber auch auf scheinbar simple Faktoren wie Pünktlichkeit bei den Mitarbeitern zu achten. Die Industrie- und Handelskammern (IHK) hatten ihre eigenen Angebote; diese richteten sich allerdings ausschließlich an Personen ohne Lernprobleme (z.B. Disziplinarprobleme, Alkoholprobleme, Alkohol- und Suchtkrankheiten). Die Angebote der IHKen halfen allerdings, Konkurrenzsituationen zu vermeiden.

Bei der Einrichtung von Arbeitsämter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amen auch zahlreiche ehemalige DDR-Manager zum Einsatz, viele von ihnen waren politisch belastet. Die Besetzung erfolgte oft nach Parteienproporz (Blockparteien). Es wurde versäumt, ostdeutsche Kader in westdeutschen Verwaltungsakademien zu schulen und ihnen Mentoren zuzuteilen. Auch hätte man ihnen Sachentscheidungen, nicht aber Personalentscheidungen überlassen sollen.



문서 번호 56

신연방주 관련 노동사회부(BMAS) 조치

2010 년 10 월

담당자 / 기관: 연방노동·사회부(BMAS)

내용:

이 문서는독일 통일 이후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취한 신연방주 관련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연방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1999 년 구동독지역 직업교육기회 프로그램 (Ausbildungsplatzprogramm Ost 1999) 및 2000 년에서 2006 까지 이루어진 크세노스-특별프로그램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교육, 그리고 분배" (XENOS-Sonderprogramm „Beschäftigung, Bildung und Teilhabe vor Ort“) 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Name der Maßnahme	Beschreibung	Ziele/erwartete Wirkung	Status/Zeitplan	Umsetzung in den Ländern (Beispiele)	Quellen
Eingliederungszuschüsse	<p>Gewährung von Zuschüssen für Arbeitgeber bei Einstellung eines älteren Arbeitslosen, um die bisher Langzeitarbeitslosigkeit des Geförderten voraussetzen, sollen künftig bereits nach sechsmonatiger Arbeitslosigkeit gewährt werden können.</p> <p>Die Mindestaltersgrenze wurde vom 55. auf das 50. Lebensjahr herabgesetzt.</p>	Die Förderung soll bestimmte Defizite (z.B. lange Einarbeitungszeiten) bei neu eingestellten Arbeitskräften ausgleichen.	01. 08 1999 - 31. 12. 2001	<p>Mecklenburg-Vorpommern</p> <p>Eine Förderung mit Eingliederungszuschüssen durch das Arbeitsamt ist nur dann möglich, wenn der Arbeitslose zuvor noch nicht bei dem Arbeitgeber gearbeitet hat und der Antrag vor Einstellung gestellt wurde.</p> <p>Beim Eingliederungszuschuss für besonders betroffene Schwerbehinderte gilt eine Ausnahme. Ein Eingliederungszuschuss kann auch aus einem bestehenden Beschäftigungsverhältnis gewährt werden, wenn durch eine deutlich nachvollziehbare Verschlechterung des Gesundheitszustandes eine Gefährdung des Arbeitsplatzes eintritt. Für besonders betroffene Schwerbehinderte gilt ausschließlich die Förderung nach § 222 a SGB III.</p> <p>Bei der Festsetzung der Höhe des Eingliederungszuschusses findet beim Arbeitgeber die Erfüllung der Beschäftigungspflichtquote Berücksichtigung. Je besser der Arbeitgeber seine Pflichtquote erfüllt, desto höher kann eine Förderung gewährt werden. Ferner steht die Höhe der Förderung im Zusammenhang mit der Minderleistung des</p>	<p><a href="http://www.buergerbeauftragter-mv.de/index.phtml?Aktion=showdata&amp;ID=191&amp;Instanz=384&amp;Datensatz=3&amp;SpecialTop=8">http://www.buergerbeauftragter-mv.de/index.phtml?Aktion=showdata&amp;ID=191&amp;Instanz=384&amp;Datensatz=3&amp;SpecialTop=8</a></p>

				schwerbehinderten Menschen und den konkreten Anforderungen am Arbeitsplatz.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ritten Buches des Sozialgesetzbuches	<p>Reform des Arbeitsförderungsrechts, die dazu beitragen sollen, das arbeitsförderungsrechtliche Instrumentarium effizienter auszugestalten.</p> <p>Die Leistungen werden stärker als bisher auf Zielgruppen des Arbeitsmarktes ausgerichtet</p>	<p>Die Reformen sollen dazu beitragen einer schnelleren Wiedereingliederung älterer Arbeitsloser zu ermöglichen und dem Eintritt von Langzeitarbeitslosigkeit entgegenzuwirken.</p> <p>Damit wird auch den Beschäftigungspolitischen Leitlinien der Europäischen Union Rechnung getragen, wonach die nationalen Arbeitsmarktpolitiken darauf gerichtet sein sollen, Langzeitarbeitslosigkeit zu verhindern.</p>	In Kraft seit 01.08. 1999	-	-
Sofortprogramm zur Bekämpfung der Jugendarbeitslosigkeit	<p>Das Programm sieht vor, 100000 Jugendliche kurzfristig in Ausbildung, Qualifizierung und Beschäftigung zu bringen.</p> <p>40 % der Mittel fließen in die neuen Länder. Der Anteil der Mittel für die neuen Länder ist somit größer als der Anteil dieser Länder an den arbeitslos registrierten Jugendlichen unter 25 Jahren (1998: 30,5 %)</p> <p>Für das Sofortprogramm stehen im Jahr 1999 2 Mrd. DM im Haushalt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zur Verfügung, 600 Mio. DM kommen davon aus dem Europäischen Sozialfonds.</p> <p>Ergänzend können Finanzmittel nach dem Bundesprogramm Sachkostenzuschüsse zu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1999 bei Qualifizierungs-</p>	<p>Das Sofortprogramm verfolgt neben dem Ziel des Abbaus der registrierten Jugendarbeitslosigkeit auch die Aufgabe, ausbildungs- und erwerbslose Jugendlichen, die nicht (mehr) beim zuständigen Arbeitsamt gemeldet sind, durch das Programm anzusprechen und in Qualifizierung und Beschäftigung zu vermitteln.</p>	01.01.1999 – 31.12.1999	--	<p><a href="http://doku.iab.de/chronik/31/2001_02_01_31_sofa.pdf">http://doku.iab.de/chronik/31/2001_02_01_31_sofa.pdf</a></p> <p><a href="http://www.bmbf.de/de/8829.php">http://www.bmbf.de/de/8829.php</a></p>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eingesetzt werden.				
Ausbildungsplatzprogramm Ost 1999	<p>Im Rahmen dieses Programms werden bis zu 17 500 zusätzliche Ausbildungsplätze für Jugendliche gefördert, die unmittelbar vor Maßnahmenbeginn bei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 als noch nicht vermittelte Ausbildungsplatzbewerber gemeldet sind.</p> <p>Dafür sind bis zum Jahr 2002 rund 232 Mio. DM erforderlich. Die neuen Länder werden sich in gleicher Höhe beteiligen.</p>	Primäres Ziel bleibt die Ausweitung des betrieblichen Ausbildungsplatzangebots, insbesondere in wirtschaftlich konkurrenzfähigen Branchen und Unternehmen mit der Perspektive, diesen Wirtschaftszweigen mittelfristig das erforderliche Fachkräftepotenzial in modernen oder modernisierten Berufen verfügbar zu machen.	1999	Das Ausbildungsplatzprogramm Ost 1999 war mit 15.575 (89,0 %) Teilnehmern und Teilnehmerinnen besetzt. In betriebsnahen Maßnahmen befanden sich 65,0 %, 21,0 % in schulischen und 14,0 % in außerbetrieblichen Maßnahmen.	<a href="http://www.bmbf.de/de/9062.php">http://www.bmbf.de/de/9062.php</a>  <a href="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a>
Initiative Neue Qualität der Arbeit (INQA)	Bund, Länder, Sozialversicherungsträger, Arbeitgeber und Gewerkschaften, Stiftungen und eine Vielzahl von Unternehmen arbeiten unter dem gemeinsamen INQA-Dach an praktischen Lösungsvorschlägen für eine sichere, gesunde und wettbewerbsfähige Arbeitswelt. Dabei tragen alle Akteure in ihren Verantwortungsbereichen dazu bei, qualitativ gute Arbeitsbedingungen zum Wohle der Betriebe und Beschäftigten zu realisieren.	Bewältigung des demographischen Wandels. Schaffen guter Arbeitsbedingungen und dabei die Interessen der Beschäftigten und der Unternehmen miteinander zu verbinden.	2002 gestartet		<a href="http://www.inqa.de/">http://www.inqa.de/</a>
30.000 Zusatzjobs für Ältere ab 58 Jahren	Bis zu 30.000 Arbeitsgelegenheiten mit einer bis zu dreijährigen Förderdauer für ältere Langzeitarbeitslose ohne berufliche Perspektive	Schaffung von Arbeitsgelegenheiten mit Mehraufwandsentschädigung für Langzeitarbeitslose ab 58 Jahren	Rd. 24% davon entfallen auf die neuen Länder einschließlich Berlin	-	-
Bundesprogramm Perspektive 50plus	Das Bundesprogramm ist Bestandteil der "Initiative 50plus"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fähigkeit und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62 regionale Beschäftigungspakte unterstützen ältere	In der zweiten Programmphase sollen über 200.000 ältere Langzeitarbeitslose aktiviert werden und hieraus bis zu 50.000 Integrationen in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erzielt werden. Die Beschäftigungspakte, ihre Konzepte und Netzwerke sollen	1. Programmphase von Oktober 2005 bis Ende Dezember 2007 2. Programmphase von Anfang 2008 bis Ende 2010	Ca. 40% davon in den neuen Ländern umgesetzt.	<a href="http://www.perspektive50plus.de/">http://www.perspektive50plus.de/</a>

	Langzeitarbeitslose bei der Wiedereingliederung in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In den Beschäftigungspakten werden Integrationsstrategien entwickelt, die an die regionalen Bedürfnisse angepasst sind. Während der ersten Programmphase wurden rund 80.000 ältere Langzeitarbeitslose aktiviert und hieraus rund 22.500 Integrationen erzielt.	weiter stabilisiert werden, damit sie auch nach Ablauf der zweiten Programmphase die Zielgruppe weiter fördern.			
Initiative 50 plus	Dem drohenden Fachkräftemangel in der Zukunft begegnen, durch Forcierung von Qualifizierung, Gesundheitsvorsorge und neue Formen der altersgerechten Arbeitszeitgestaltung	Höhere Erwerbsbeteiligung älterer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eine deutliche Erhöhung der Teilnahme an beruflicher Weiterbildung und eine bessere Wiedereingliederung älterer Arbeitsloser.	Erste Programmphase am 13. September 2006 beschlossen	-	-
Nationaler Pakt für Ausbildung und Fachkräftenachwuchs in Deutschland (2004-2010)	Die Wirtschaft setzt sich für den Zeitraum 2007-2010 das verbindliche Ziel, im Durchschnitt pro Jahr 60.000 neue Ausbildungsplätze und jährlich 30.000 neue Ausbildungsbetriebe einzuwerben sowie jährlich 40.000 Plätze für betrieblich durchgeführte Einstiegsqualifizierungen bereitzustellen. Die Bundesregierung wird die Förderung von jährlich 40.000 Plätzen für betrieblich durchgeführte Einstiegsqualifizierungen sicherstellen.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wird ihre ausbildungsfördernden Leistungen auf hohem Niveau fortsetzen und zur Verbesserung der Berufsorientierung und Ausbildungsreife von Schulabgängern verstärkt die	Verbesserung des Ausbildungsangebotes durch Erschließung neuer Potenziale für zusätzliche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Der Paktlenkungsausschuss hat am 5.März.2007 die Verlängerung und Fortentwicklung des Ausbildungspaktes bis 2010 beschlossen. Der Bundesverband der Freien Berufe (BFB) ist neuer Paktpartner. Die Zusagen wurden auch 2007 eingehalten und übertroffen (88.900 neue Ausbildungsplätze, 53.600 neue Ausbildungsbetriebe, 43.250 Plätze für betriebliche Einstiegsqualifizierungen).	-	<a href="http://www.bmwi.de/BMWi/Redaktion/PDF/M-O/nationaler-pakt-fuer-ausbildung-und-fachkraeftenachwuchs-in-deutschland-2007-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http://www.bmwi.de/BMWi/Redaktion/PDF/M-O/nationaler-pakt-fuer-ausbildung-und-fachkraeftenachwuchs-in-deutschland-2007-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a>

	vertiefte Berufsorientierung und Berufswahlvorbereitung ausweiten.				
Ausbildungsbonus	Mit dem Ausbildungsbonus sollen schnell zusätzliche Ausbildungsplätze für förderungsbedürftige Ausbildungsuchende aus früheren Schulentlassjahren geschaffen werden. Ziel der Förderung ist der Abbau des hohen Altbewerberbestandes. Arbeitgeber, die in den kommenden drei Ausbildungsjahren zusätzliche Ausbildungsplätze im dualen System schaffen und diese mit förderungsbedürftigen Ausbildungsuchenden besetzen, werden mit einem einmaligen Ausbildungsbonus in Höhe von 4.000, 5.000 oder 6.000 Euro je zusätzlichem Auszubildenden unterstützt. Dabei wird das Merkmal der Zusätzlichkeit eng gefasst, um Mitnahmeeffekte zu unterbinden und Missbrauchsfälle zu verhindern.	Schaffung und Besetzung zusätzlicher Ausbildungsplätze	1. Juli 2008 bis 31. Dezember 2010  Fün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ritten Buches Sozialgesetzbuch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Ausbildungschancen förderungsbedürftiger junger Menschen BGBl I.2008	-	<a href="http://www.ausbildungsbonus.bmas.de">http://www.ausbildungsbonus.bmas.de</a>
Bundesprogramm Kommunal-Kombi (Bundesprogramm zur Förderung von zusätzlichen Arbeitsplätzen, die in Regionen mit besonders hoher und verfestigter Langzeitarbeitslosigkeit durch Kommunen geschaffen werden)	Arbeitgeber (Städte, Gemeinden, Kreise oder andere Arbeitgeber im Einvernehmen mit der Kommune) werden gefördert, wenn sie zusätzliche und im öffentlichen Interesse liegende Arbeitsplätze für Langzeitarbeitslose schaffen, die seit mindestens 2 Jahren arbeitslos gemeldet sind und seit mindestens 1 Jahr ALG II beziehen; Zuschuss: 50 % des Arbeitnehmerbruttolohns (max. 500 € finanziert durch den Bund), Zuschuss zu den Sozialversicherungsbeiträgen des	Schaffung von zusätzliche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n Arbeitsplätzen in Regionen mit erheblichen Arbeitsmarktproblemen, insbesondere in den ostdeutschen Bundesländern; Entlastung der regionalen Arbeitsmärkte; Verbesserung der kommunalen Infrastruktur	Bewilligungszeitraum vom 01.01.2008 bis zum 31.12.2009; Arbeitsplätze werden bis längstens 31.12.2012 gefördert	-	<a href="http://www.bva.bund.de/DE/Aufgaben/Abt__II/esf-projekte/KommunalKombi/KommunalKombi-node.html">http://www.bva.bund.de/DE/Aufgaben/Abt__II/esf-projekte/KommunalKombi/KommunalKombi-node.html</a>

	AG in Höhe von max. 200 € (finanziert aus ESF), Erhöhung des Zuschusses zu den Lohnkosten um 100 € bei Personen über 50 Jahren (finanziert aus ESF)				
Berufseinstiegsbegleitung	Mit der Einführung der Berufseinstiegsbegleitung wird befristet die Möglichkeit geschaffen, leistungsschwächere Schüler der allgemein bildenden Schulen über längere Zeit individuell beim Übergang von Schule in Ausbildung oder Beschäftigung zu begleiten. Die Berufseinstiegsbegleitung soll dazu beitragen, die Chancen der Schüler auf einen erfolgreichen Übergang in eine duale Ausbildung deutlich zu verbessern. Die Berufseinstiegsbegleitung soll bereits während des Besuchs der Vorabgangsklasse beginnen und endet, wenn der Jugendliche erfolgreich in eine Berufsausbildung eingemündet ist, jedoch spätestens 24 Monate nach Beendigung der allgemein bildenden Schule.	Verbesserung der Chancen auf einen erfolgreichen Übergang von der Schule in eine berufliche Ausbildung	2008 – 2014  Fün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ritten Buches Sozialgesetzbuch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Ausbildungschancen förderungsbedürftiger junger Menschen BGBl I.2008	-	<a href="http://www.good-practice.de/infoangebote_beitrag3544.php">http://www.good-practice.de/infoangebote_beitrag3544.php</a>
"XENOS - Integration und Vielfalt – sowie "ESF-Bundesprogramm zur arbeitsmarktlichen Unterstützung für Bleibeberechtigte und Flüchtlinge mit Zugang zum Arbeitsmarkt" (ESF-Förderphase 2007-2013)	Weiterentwicklung erfolgreicher, insbesondere präventiver Lösungsansätze an der Schnittstelle von (Berufs-)Schule, Ausbildung und Arbeitswelt insbesondere in Ostdeutschland und Erweiterung um transnationale Maßnahmen insbesondere mit Ländern Mittel- und Osteuropas. Das "ESF-Bundesprogramm zur arbeitsmarktlichen Unterstützung für Bleibeberechtigte und Flüchtlinge mit Zugang zum	Unterstützung der Integration von deutschen und ausländischen Jugendlichen und jungen Erwachsenen, aber auch Älteren und Strafgefangenen, in den Arbeitsmarkt und europaweite Förderung von Toleranz, Demokratie und Vielfalt in der Gesellschaft.	Beginn der Projekte ab September 2008	-	<a href="http://www.esf.de/portal/generator/6592/xenos.html">http://www.esf.de/portal/generator/6592/xenos.html</a>



	Arbeitsmarkt" fördert als Sonderprogramm im Rahmen von XENOS die Integration von Bleibeberechtigten und Flüchtlingen in den Ausbildungs- und Arbeitsmarkt.				
XENOS-Sonderprogramm „Beschäftigung, Bildung und Teilhabe vor Ort“ (ESF-Förderphase 2000-2006)	Integration von Langzeitarbeitslosen und Jugendlichen - insbesondere auch mit Migrationshintergrund - in eine Ausbildung und in den Arbeitsmarkt; Förderung von sozialer Integration, der Zivilgesellschaft und des Gemeinwesens in Städten und Gemeinden insbesondere im ländlichen Raum Ostdeutschlands	Unterstützung kommunaler Kooperationsstrukturen und sozialer Netzwerke sowie Stärkung der Zivilgesellschaft und des sozialen Zusammenhalts insbesondere in den Programmgebieten der Sozialen Stadt und im ländlichen Raum Ostdeutschlands	Bis Ende September 2008 werden rund 170 Projekte gefördert	-	<a href="http://www.esf.de/porta l/generator/6592/xenos.html">http://www.esf.de/porta l/generator/6592/xenos.html</a>



문서 번호 57

신연방주 관련 연방교육연구부(BMBF) 조치

2010 년 10 월

담당자 / 기관: 연방교육·연구부(BMBF)

내용:

이 문서는독일 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BMBF)가 취한 신연방주 관련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다:

-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
- "지역혁신 (InnoRegio)" 프로그램
- 지역혁신 성장핵심양성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구조진흥 프로그램
- 특별프로그램: "학문이 시장을 만든다"
- 연구과 수업에 있어 여성을 위한 성평등
- 동독지역 직업교육기회확충 프로그램
- 혁신능력센터
- 혁신포럼
- 경제관련 전문대 (FH3) 내 응용연구
- 혁신 프로파일 (InnoProfile)
- 직업교육 및 전문인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국가협약 (2004-2010 년)
- 대학교협약 2020
- 직장 외부 공동직업교육학교(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지원
- 직업스타터(Jobstarter)
- "기업과 지역" 혁신 이니셔티브

- "신연방주 내 첨단연구 및 혁신"

출처: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Name der Maßnahme	Beschreibung	Ziele/erwartete Wirkung	Status/Zeitplan	Umsetzung in den Ländern (Beispiele)	Quellen
Programm „Frau und Beruf“	<p>Das Programm wird u.a. Maßnahmen vorseh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e die Ausbildungschancen junger Frauen verbessern, gerade auch in zukunfts orientierten Berufen,</li> <li>- die die Benachteiligung für Existenzgründerinnen bei der Start- und Fremdkapitalbeschaffung abbauen,</li> <li>- die flexible Arbeitszeitregelungen und bessere Bedingungen für Teilzeitarbeit ermöglichen,</li> <li>- die die Vereinbarkeit von Familien- und Erwerbsarbeit fördern,</li> <li>- die der Einkommens- und Lohndiskriminierung von Frauen entgegenwirken und</li> <li>- die den Frauenanteil in Lehre und Forschung erhöhen sollen.</li> </ul>	<p>Ziel ist, mit vielfältigen Maßnahmen die Chancengleichheit von Männern und Frauen im Beruf und in der Gesellschaft mit Nachdruck voranzubringen.</p>	<p>Juni 1999 - beendet</p>	<p>Sachsen</p> <p>Im Sinn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dem sich die Sächsische Landesregierung 2004 per Beschluss bekannt hat, wird Gleichstellungspolitik aber auch als eine Querschnittsaufgabe in allen Ressorts verstanden. Mit diesem Ziel wurden in allen Ressorts Gender Mainstreaming-Beauftragte eingesetzt und Pilotprojekte initiiert sowie ein interministerieller Arbeitskreis Gender Mainstreaming gegründet.</p>	<p><a href="http://www.bmbf.de/de/9563.php">http://www.bmbf.de/de/9563.php</a></p> <p><a href="http://www.gwi-boell.de/web/eu-laendervergleich-eu-laendervergleich-deutschland-317.html">http://www.gwi-boell.de/web/eu-laendervergleich-eu-laendervergleich-deutschland-317.html</a></p>
Programm „InnoRegio“	<p>Bestandteil des Programms Unternehmen Region. Kreative neue Ideen entstehen dort, wo sich Menschen aus verschiedensten Disziplinen, Branchen und Institutionen begegnen. Eine Region ist dann erfolgreich, wenn sich ein Netzwerk bildet, in dem die Fähigkeiten, Erfahrungen und Schlüsseltechnologien der Region</p>	<p>Herausbildung regionaler Entwicklungsprofile. Durch Kooperationen von Bildungs- und Forschungseinrichtungen sowie Wirtschaft und Verwaltung mit einem gemeinsamen Innovationskonzept soll die regional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gestärkt werden.</p>	<p>1999-2006</p>	<p>Insgesamt 23 geförderte Netzwerke in den neuen Ländern. Seit 2001 setzen diese ausgewählten Initiativen ihre Innovationskonzepte in rund 1.100 Einzelprojekten und acht Highlight-Projekten in die Praxis um. Im Untersuchungszeitraum von 2000 bis 2004 ist die Zahl der Beschäftigten in den geförderten Unternehmen um 11 Prozent</p>	<p><a href="http://www.bmbf.de/de/1277.php">http://www.bmbf.de/de/1277.php</a></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288.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288.php</a></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82.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82.php</a></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306.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306.php</a></p>

	<p>zusammentreffen - wo etwas Neues, Einmaliges und Hervorragendes entstehen kann. Ein Netzwerk, das regionale Traditionen aufgreift, eine gemeinsame Innovationsstrategie für die Region entwickelt und der Region ein unverwechselbares Profil gibt.</p> <p>Es ist vorgesehen, bis 2005 hierfür insgesamt 500 Mio. DM bereitzustellen.</p> <p>Zur Intensivierung der Zusammenarbeit zwischen Wirtschaft und Wissenschaft wird die Bildung von Netzwerken gezielt gefördert.</p> <p>Zur Unterstützung von regionalen Initiativen mit hohem wissenschaftlich-technischen Potenzial ist zudem das Programm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neu eingerichtet worden.</p>	<p>Die begünstigten Initiativen sollen dazu beitragen, dass die Regionen weiter an Wirtschaftsprofil gewinnen.</p>		<p>gestiegen. Bei knapp einem Drittel der Unternehmen ist jeder zweite Mitarbeiter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tätig. Dies trug dazu bei, dass 44 Prozent der Betriebe in den letzten beiden Erhebungsjahren Patente anmelden konnten und 39 Prozent damit völlig neue Produkte entwickelten. Drei Viertel der Unternehmen exportieren ihre Produkte und konnten ihre Ausfuhren seit 2000 um 73 Prozent steigern.</p> <p>Sachsen: ChemnitzINNtex - Textilregion Mittelsachsen</p> <p>Die kleinen und mittleren Textil- und Bekleidungsunternehmen Mittel-sachsens entwickeln sich durch Innovationen, intensive Kooperation und informationstechnische Vernetzung zu einem international wettbewerbsstarken Verbund..</p> <p>Das Image des Verbundes bzw. der Region soll bestimmt werden du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hnellste Reaktion auf Markt- und Kundenanforderungen</li> <li>- hohe Forschungsintensität und permanentes Anbieten von Neuerungen</li> <li>- strikte Qualitätssicherung und Durchsetzung international führender ökologischer Standards</li> <li>- überdurchschnittliche Kreativität, Fachkompetenz und Lernfähigkeit der Akteure</li> </ul> <p>In Umsetzung des InnoRegio-</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159.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159.php</a></p>
--	--	--	--	--	--

				<p>Konzeptes wollen die Akteure ihren Standort zu einer textilen Modellregion entwickeln.</p> <p>Brandenburg: Potsdam</p> <p>BioHyTec Biohybrid-Technologien</p> <p>Ziel ist die Entwicklung von Produkten im Biochipformat für spezielle Marktnischen und der Ausbau einer regionalen Wertschöpfungskette - von der Forschung, der Entwicklung einer Technologieplattform, der Produktion bis hin zur Aus- und Weiterbildung im Bereich der biohybriden Technologien.</p> <p>Die Technologieplattform für diese Produkte wird im Biochip Kompetenz-Zentrum entwickelt, die Fertigung der Biochips soll das Biochip Produktionszentrum, das im Biotechnologiepark Luckenwalde geplant ist, übernehmen.</p>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p>Weiterentwicklung von InnoRegio.</p> <p>Das Förderprogramm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richtet sich an regionale Kooperationen, die über eine Plattformtechnologie oder das Potenzial hierfür verfügen und wesentliche Alleinstellungsmerkmale in ihrem Kompetenzbereich aufweisen.</p> <p>Unterstützt werden regionale Initiativen mit hohem wissenschaftlich-technischen Potential.</p> <p>Das Programm, für das in den Jahren 2001 bis 2003 insgesamt</p>	<p>Die begünstigten Initiativen sollen dazu beitragen, dass die Regionen weiter an Wirtschaftsprofil gewinnen.</p> <p>Es will exzellente regionale-unternehmerische Bündnisse fördern.</p> <p>Bündnisse, die in ihrer Region wichtige Impulse für Wirtschaft, Wissenschaft, Ausbildung und Forschung setzen und dadurch Grundlagen für eine Entwicklung der Region zu einem Cluster schaffen.</p>	01.03.01 ( mit Modul WK Potenzial seit 2007)	<p>Die Initiativen werden mit Beträgen zwischen 5 und 13 Mio. Mark dabei unterstützt, die konkreten Einzelprojekte ihrer Akteure umzusetzen.</p> <p>Sachsen-Anhalt: Industrielle Produktion Therapeutischer Rekombinanter Proteine</p> <p>Sachsen: Zukunftsmarkt neue Werkstoffe, ASGLAWO GmbH</p> <p>INNOCIS: Innovationsinitiative kostengünstige, flexible CIS-Photovoltaik.</p>	<p><a href="http://www.bmbf.bund.de/pub/011009_regionale_innovationsinitiativen.pdf">http://www.bmbf.bund.de/pub/011009_regionale_innovationsinitiativen.pdf</a></p> <p><a href="http://www.bmbf.de/pub/innovative_regionale_wachstumskerne.pdf">http://www.bmbf.de/pub/innovative_regionale_wachstumskerne.pdf</a></p> <p><a href="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amp;doc=8389">http://www.foerderdatenbank.de/Foerder-DB/Navigation/Foerderrecherche/suche.html?get=views;document&amp;doc=8389</a></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20080216_Broschuere_Innovative_regionale">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20080216_Broschuere_Innovative_regionale</a></p>

	150 Mio. DM vorgesehen sind, wird aus Mitteln des Zukunftsinvestitionsprogramms (ZIP) finanziert			Seit 2001 werden 25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in den Neuen Ländern gefördert.	_Wachstumskerne_Barrierefrei_V07(2).pdf <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79.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79.php</a>
Programm zur Förderung innovativer Forschungsstruktur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	Unterstützung des Auf- und Ausbau international konkurrenzfähiger Hochschul- und Forschungsstrukturen	Förderung der Weiterentwicklung von Hochschule und Wissenschaft sowie Realisierung der Chancengleichheit für Frauen in Forschung und Lehre	2001 - 2006	Berlin: Regine-von-Ramin Labor/Deutsches Rheuma-Forschungszentrum Berlin Mecklenburg-Vorpommern: Universität Greifswald - Projekt "Asien und Europa. Kulturkontakte und kulturelle Transformationsprozesse zwischen Mittelalter und Gegenwart"	<a href="http://www.drfg.de/index.php?id=486&amp;L=0">http://www.drfg.de/index.php?id=486&amp;L=0</a> <a href="http://www.phil.uni-greifswald.de/fileadmin/mediapool/histin/Neuzeit/Asien_und_Europa_North.pdf">http://www.phil.uni-greifswald.de/fileadmin/mediapool/histin/Neuzeit/Asien_und_Europa_North.pdf</a>
Aktionsprogramm „Wissen schafft Märkte“:	Mit dem Programm soll eine schnelle Marktreife von wissenschaftlichen Forschungsergebnissen erreicht werden, um bisher unbegrenzte Potenziale in der Zusammenarbeit zwischen Wissenschaft und Wirtschaft auszuschöpfen (Verwertungs-, Ausgründungs-, Patent- und Kompetenzoffensive).  Es werden 100 Mio. DM von der Bundesregierung zur Verfügung gestellt.	Mit der Verwertungsoffensive wird die Rolle der Hochschulen bei der Patentierung und Verwertung gestärkt und eine unterstützende Infrastruktur gefördert.  Mit den einzelnen Programmen sollen die Universitäten das Recht erhalten, Erfindungen aus ihrem Bereich selbst zu Patenten anzumelden.  Hinzu kommen professionelle Patentierungs- und Verwertungsagenturen.  Die Ausgründungsoffensive hat zum Ziel, gründungswillige Wissenschaftlerinnen und Wissenschaftler für die Verwertung von Forschungsergebnissen in eigenen Unternehmen mobilisieren.	2001-2003	In Brandenburg haben sich vor diesem Hintergrund acht Hochschulen zu der „Verwertungsoffensive Brandenburg“ zusammengeschlossen und die Patentverwertungsagentur „Brainshell“ bei der Zukunfts-Agentur Brandenburg GmbH (ZAB) mit der Verwertung und Vermarktung ihrer Forschungsergebnisse beauftragt.  Das gemeinsame Projekt wird bis Ende 2003 mit einer Million Euro gefördert.  Zusätzlich stehen über „Brainshell“ Mittel für eine insgesamt 100-prozentige Förderung von Patentanmeldungen aus Hochschulen zur Verfügung, damit aus guten Ideen und Forschungsergebnissen erfolgreiche Produkte „invented in Brandenburg“ entstehen.	<a href="http://www.biomedtec-franken.de/ger/kurz.htm">http://www.biomedtec-franken.de/ger/kurz.htm</a> <a href="http://www.uni-potsdam.de/portal/juni02/bohlen.htm">http://www.uni-potsdam.de/portal/juni02/bohlen.htm</a>
„Chancengleichheit für Frauen in Forschung und Lehre“	Stärkung der Position der Frauen in der Wissenschaft	Ziele im Fachprogramm „Chancengleichheit für Frauen in Forschung und Lehre“, welches Teil des Hochschul-	01.01. 2001 - 31.12. 2006	-	<a href="http://www.gesis.org/cews/das-cews/cews-projekte/projekt/?browseproject=&amp;selcat=HWP%3E%3E&amp;qt1=HWP">http://www.gesis.org/cews/das-cews/cews-projekte/projekt/?browseproject=&amp;selcat=HWP%3E%3E&amp;qt1=HWP</a>



		<p>und Wissenschaftsprogramms (HWP) ist, sind die Überwindung bestehender struktureller Hemmnisse, die Verstärkung der Anteile von Frauen in allen wissenschaftlichen Qualifikationsstufen und die Erhöhung der Zahl von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in der Wissenschaft. Gegenstände der Förderung sind insbesonde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ßnahmen, die zu einer Qualifizierung für eine Professur an Universitäten oder für eine Professur an Fachhochschulen oder zu einer Promotion führen (qualifizierungsbezogene Maßnahmen);</li> <li>- Maßnahmen der Frauen- und Genderforschung</li> <li>- Maßnahmen zur Steigerung des Anteils von Frauen in naturwissenschaftlichen und technischen Studiengängen.</li> </ul> <p>Das innovative Potenzial liegt in der Entwicklung umfassender Chancengleichheit von Frauen in Forschung und Lehre.</p> <p>Der Frauenanteil an Professuren soll von derzeit 10 % auf 20 % im Jahr 2005 erhöht werden.</p>			
Ausbildungsplatzprogramm Ost	Nach den Programmen im	Schaffung von	Im Jahr 2002 14 000	Förderung von zusätzlichen	<a href="http://www.bmbf.de/de/2323">http://www.bmbf.de/de/2323</a>

	<p>Rahmen der Gemeinschaftsinitiativen Ost engagieren sich Bund und neue Länder seit 1996 in spezifischen Ausbildungsplatzprogrammen für die neuen Länder. Diese Programme werden jährlich neu zwischen dem Bund und den neuen Ländern entsprechend der Ausbildungsplatzentwicklung vereinbart und je zur Hälfte finanziert. Die Durchführung der Programme erfolgt seitens der Länder entsprechend ihrer landesspezifischen Gegebenheiten auf dem Arbeits- und Ausbildungsmarkt.</p>	<p>Ausbildungsplätzen. Mit dem Programm soll der Übergang von außerbetriebliche in reguläre betriebliche Ausbildungsverhältnisse verbessert werden.</p>	<p>zusätzliche Leerstell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 Das BMBF stellt für die Programmlaufzeit von September 2008 bis Dezember 2011 insgesamt rund 47,5 Mio. Euro bereit</p>	<p>Ausbildungsplätz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 Pro Fall weist der Bund den Ländern 6.774,62 Euro (nicht rückzahlbare Mittel) zu. Die Länder werden aus ihren Haushalten zusätzliche Programmplätze zur Aufstockung dieses Programms finanzieren.</p> <p>Sachsen-Anhalt: GAJL – Gegen Abwanderung junger LandesKinder): Projekt aus dem Landkreis Mansfeld-Südharz zur Eingliederung junger Arbeitsloser mit abgeschlossener Berufsausbildung in den ersten Arbeitsmarkt;</p>	<p>.php</p> <p><a href="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http://www.bmbf.de/pub/vereinbarung_ausbildungsplatzprogramm_ost_2008.pdf</a></p> <p><a href="http://www.bbi-bildung.de/de/filialen/eisleben/angebote/gajl-gegen-abwanderung-junger-landeskinder/gajl-01082009-31012011.html">http://www.bbi-bildung.de/de/filialen/eisleben/angebote/gajl-gegen-abwanderung-junger-landeskinder/gajl-01082009-31012011.html</a></p>
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p>Bestandteil des Programms Unternehmen Region. Das Programm "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baut herausragende Forschungsansätze an Hochschulen und Forschungseinrichtung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zu international renommierten Zentren aus. Entscheidend für diese Zentren ist eine exzellente und international wettbewerbsfähige Forschung, aber auch "Innovationskompetenz", also die Fähigkeit, Forschungsergebnisse in die Wirtschaft zu transferieren. Die Zentren sollen zudem eine Sogwirkung auf den wissenschaftlichen Nachwuchs ausüben.</p>	<p>Aufbau von international wettbewerbsfähigen Zentren für Spitzenforschung an ostdeutschen Hochschulen und Forschungseinrichtungen.</p>	<p>Seit 2002</p>	<p>In der ersten Phase (ab November 2002) wurden zwölf auf Vorschlag der Bundesländer ausgewählte Zentren mit jeweils max. 250.000 Euro bei der Strategieentwicklung unterstützt und darüber hinaus durch eine Unternehmensberatung betreut.</p> <p>In der zweiten Phase (2004-2010) unterstützt das BMBF sechs von einer unabhängigen Expertenjury positiv bewertete Zentren bei der Umsetzung ihrer strategischen Konzeptionen. Im Mittelpunkt steht dabei die Finanzierung von jeweils zwei Gruppen mit internationalen Nachwuchswissenschaftlern. Das Finanzvolumen für die Maßnahmen beläuft sich bis 2012 auf 77 Mio. Euro.</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350.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350.php</a></p>
Innovationsforen	<p>Bestandteil des Programms Unternehmen Region. Das Programm "Innovationsforen" hat die Aufgabe, regionale Netzwerke in</p>	<p>Förderung der Bildung von Innovationsnetzwerken aus Unternehmen,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und anderen</p>	<p>Seit 2003</p>	<p>Bislang wurden bzw. werden 113 Innovationsforen gefördert. Jährlich kommen weitere Foren hinzu, die jeweils mit einem Förderhöchstbetrag von 85.000</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162.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162.php</a></p>

	<p>ihrer Startphase zu unterstützen. Die Förderung hilft den Initiativen, ihr Netzwerk zu bilden, ihr thematisches Profil zu schärfen und Kontakte und Kooperationen auf- und auszubauen.</p>	<p>Akteuren. Zielgruppe des Programms sind innovative Allianzen, die noch am Anfang ihrer Entwicklung stehen sowie existierende, bereits geförderte Innovationsverbände, die durch das Innovationsforum eine neue qualitative Ebene in ihrem Innovationsfeld erreichen wollen.</p>		<p>Euro (neue Initiativen) bzw. 40.000 Euro (bestehende, bereits geförderte Innovationsbündnisse) für maximal sechs Monate unterstützt werden.</p>	
<p>Angewandte Forschung an Fachhochschulen im Verbund mit der Wirtschaft (FH3)</p>	<p>Neuausrichtung des seit 1992 laufenden Programms "Anwendungsorientierte Forschung und Entwicklung an Fachhochschulen" (aFuE). Damit Schwerpunktverlagerung von Fördertätigkeit zugunsten von Fachhochschulen hin zur Unterstützung wirtschaftsnaher regionaler Forschungsverbände an Fachhochschulen.</p>	<p>Förderung von anwendungsnahen Forschungsprojekten zwischen Fachhochschulen und externen Partnern, um die Verbundfähigkeit der Fachhochschulen zu verbessern und den Wissens- und Technologietransfer in Unternehmen zu intensivieren.</p>	<p>Gültig seit der Ausschreibung der Förderrunde 2004.</p>	<p>Sachsen: Westsächsische Hochschule Zwickau (Fachbereich Maschinenbau und Kraftfahrzeugtechnik) – Wirtschaftliche und qualitätssichere Kleinserienfertigung von Keramikteilen durch hochleistungsschleifen;</p> <p>Fachhochschule der Deutschen Telekom Leipzig und Fachhochschule Gießen-Friedberg – Breitbandiges drahtloses Internet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p> <p>Brandenburg: Fachhochschule Neubrandenburg – Entwicklung eines immunchemischen Schnelltestverfahrens zum Nachweis von Patulin in Lebensmitteln (PATUTEST)</p>	<p><a href="http://www.bmbf.de/de/864.php">http://www.bmbf.de/de/864.php</a></p> <p>M. Kulicke/Azimmermann/ H. Kroll/S. Bühner, Evaluation des BMBF-Förderprogramms 2004–2006, (Bonn/Berlin 2008)</p> <p><a href="http://www.bmbf.de/pub/evaluation_fachhochschulen.pdf">http://www.bmbf.de/pub/evaluation_fachhochschulen.pdf</a></p> <p><a href="http://www.aif.de/fh/files/verbuende2004.pdf">http://www.aif.de/fh/files/verbuende2004.pdf</a></p>
<p>InnoProfile</p>	<p>Bestandteil des Programms Unternehmen Region. Innovationen sind als Schlüssel für den Aufbau Ost zu bewerten. Nur durch auf Innovationen basierendes Wachstum, durch neue Produkte und Märkte, die daraus entstehen, werden Regionen zukunftsfähig. Potenziale und Stärken von Regionen müssen erkannt, systematisch ausgebaut u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rausarbeiten eines "passgenauen Innovations-, Forschungs- und Bildungsumfeldes für wissensbasierte, Profil prägende Unternehmen in der Region.</li> <li>- Forschung zu "technologisch" grundlegenden Fragen für Produktgenerationen der Zukunft.</li> </ul>	<p>Das Programm startete im Juni 2005 und wird bis zum Jahr 2013 mit insgesamt 140 Mio. Euro gefördert</p>	<p>Brandenburg: Universität Potsdam/Institut für Biochemie und Biologie – Nachwuchsgruppe Antikörper-Technologien;</p> <p>Sachsen: TU Chemnitz/Anlagen- und Maschinenbau – Auftragschichten (Fertigung von funktions- und fertigungsoptimierten Schichten für typische, hoch beanspruchte Bauteile);</p> <p>Mecklenburg-Vorpommern: Ernst-</p>	<p><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innoprofile.pdf">http://www.unternehmen-region.de/_media/innoprofile.pdf</a></p> <p><a href="http://www.bio.uni-potsdam.de/nachwuchsgruppen/innoprofile-dr-heilmann/ak-technologie-dr-heilmann">http://www.bio.uni-potsdam.de/nachwuchsgruppen/innoprofile-dr-heilmann/ak-technologie-dr-heilmann</a></p> <p><a href="http://www.tu-chemnitz.de/mb/SchweiTech/auftragschichten/">http://www.tu-chemnitz.de/mb/SchweiTech/auftragschichten/</a></p> <p><a href="http://www.cdatgreifswald.de/">http://www.cdatgreifswald.de/</a></p>

	genutzt werden Innoprofile verbindet diese Erkenntnisse mit dem Aspekt, dass der richtige wissenschaftliche Nachwuchs benötigt wird. Daher steht im Mittelpunkt des Programms die "wirtschaftsorientierte Nachwuchsforsch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fbau und Sicherung von qualifiziertem Nachwuchs für die regionale Wirtschaft und Wissenschaft.</li> <li>- Profilbildung der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in Forschung und Lehre entsprechend dem wirtschaftlichen Profil der Region.</li> <li>- Beschreiten neuer Wege der Kooperation von Wissenschaft und Wirtschaft im Sinne eines optimalen Technologietransfers.</li> <li>- Und damit langfristig die nachhaltige Entwicklung von unverwechselbaren "Kompetenzregionen".</li> </ul>		Moritz-Arndt-Universität Greifswald/Center of Drug Absorption and Transport (C_DAT) - Wirkstofftransportbasierte Konzepte und Drug-Delivery-Technologien zur Optimierung der klinischen Anwendung von Arzneimitteln.	Content/1
Nationaler Pakt für Ausbildung und Fachkräftenachwuchs in Deutschland (2004-2010)	Die Wirtschaft setzt sich für den Zeitraum 2007-2010 das verbindliche Ziel, im Durchschnitt pro Jahr 60.000 neue Ausbildungsplätze und jährlich 30.000 neue Ausbildungsbetriebe einzuwerben sowie jährlich 40.000 Plätze für betrieblich durchgeführte Einstiegsqualifizierungen bereitzustellen. Die Bundesregierung wird die Förderung von jährlich 40.000 Plätzen für betrieblich durchgeführte Einstiegsqualifizierungen sicherstellen. Die Bundesagentur für Arbeit wird ihre ausbildungsfördernden Leistungen auf hohem Niveau fortsetzen und zur Verbesserung der Berufsorientierung und Aus-	Verbesserung des Ausbildungsangebotes durch Erschließung neuer Potenziale für zusätzliche betriebliche Ausbildungsplätze	Der Paktlenkungsausschuss hat am 5. März 2007 die Verlängerung und Fortentwicklung des Ausbildungspaktes bis 2010 beschlossen. Der Bundesverband der Freien Berufe (BFB) ist neuer Paktpartner. Die Zusagen wurden auch 2007 eingehalten und übertroffen (88.900 neue Ausbildungsplätze, 53.600 neue Ausbildungsbetriebe, 43.250 Plätze für betriebliche Einstiegsqualifizierungen).	-	<a href="http://www.bmwi.de/Dateien/BMWi/PDF/nationales-reformprogramm-2008-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http://www.bmwi.de/Dateien/BMWi/PDF/nationales-reformprogramm-2008-2010,property=pdf,bereich=bmwi,sprache=de,rwb=true.pdf</a>

	bildungsreife von Schulabgängern verstärkt die vertiefte Berufsorientierung und Berufswahlvorbereitung ausweiten.				
Hochschulpakt 2020	Der Hochschulpakt 2020 beruht auf zwei Säulen einem Programm zur Aufnahme zusätzlicher Studienanfänger, denen insbesondere durch die Schaffung zusätzlicher Stellen ein qualitativ hochwertiges Hochschulstudium ermöglicht werden soll, und einer Programmkostenpauschale für erfolgreiche Hochschulforschung, die sich im Wettbewerb um Fördermittel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DFG) durchsetzt.	Bei der ersten Säule geht es um eine langfristige Grundsatzverpflichtung von Bund und Ländern zur Aufnahme zusätzlicher Studienanfänger Mit der zweiten Säule des Hochschulpakts erfolgt im Bereich der Forschungsförderung ein Einstieg in die Vollfinanzierung von Forschungsprojekten durch Programmpauschalen (sog. „Overhead“).	Der Bund wird sich an den Kosten für diese zusätzlichen Studienanfänger alleine in den Jahren 2007 bis 2010 mit insgesamt 565 Mio. Euro beteiligen. Für die Verteilung der Bundesmittel wurde dabei eine Lösung gefunden, die den unterschiedlichen Gegebenheiten insbesondere in den neuen Ländern Rechnung trägt. Die Programmpauschalen in Höhe von 20 Prozent werden ab 2007 sukzessive für von der DFG geförderte Forschungsvorhaben eingeführt.	Sachsen-Anhalt: Verpflichtung, die Aufnahmekapazität der Studienanfängerszahlen auf dem Niveau des Jahres 2005 zu halten, Marketingkampagnen, durchgeführt von den Hochschulen des Landes und des Kultusministeriums, um Studienbewerber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für die Universitäten zu gewinnen.	<a href="http://www.hochschulkampagne.de/hochschulpakt.htm">http://www.hochschulkampagne.de/hochschulpakt.htm</a> <a href="http://www.bmbf.de/de/6142.php">http://www.bmbf.de/de/6142.php</a> <a href="http://www.sachsen-anhalt.de/LPSA/index.php?id=27053">http://www.sachsen-anhalt.de/LPSA/index.php?id=27053</a>
Förderung überbetrieblicher Berufsbildungsstätten	Förderung von überbetrieblichen Berufsbildungsstätten durch die Modernisierung und die Beschaffung von Ausstattungen	Flächendeckendes Angebot an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plätzen	Von Bundesseite wurden in den inzwischen rund 100 nach modernsten Gesichtspunkten errichteten überbetrieblichen Ausbildungsstätten nahezu 15.000 Ausbildungsplätze für den langfristigen Bedarf gefördert.	Thüringen: Komzet Nachhaltiges Handwerk in Thüringen; Brandenburg: Komzet Denkmalpflege, alte Hausbautechniken	<a href="http://www.bmbf.de/de/586.php">http://www.bmbf.de/de/586.php</a> <a href="http://www.umweltzentrum.de">http://www.umweltzentrum.de</a> <a href="http://www.komzet-rdh.de">http://www.komzet-rdh.de</a>
Jobstarter	Das Ausbildungsstrukturprogramm konzentriert sich auf Ausbildungsproblemregionen oder auch Branchen mit Problemen in Deutschland und ermöglicht bundesweit eine maßgeschneiderte, bedarfsorientierte und ganzheitliche	Schaffung und Besetzung zusätzlicher Ausbildungsplätze insbesondere in innovativen Branchen, qualitative Verbesserung der Ausbildungssituation und der Ausbildungsmöglichkeiten	Programm läuft in mehreren Bekanntmachungsrunden; 4. Förderbekanntmachung in 2008, 5. Förderbekanntmachung in 2009	Brandenburg: AniA – Ausbildungsnetzwerk Landwirtschaft im Arbeitgeberzusammenschluss: Schaffung von 35 Arbeitsplätzen in der Landwirtschaft im Ausbildungsnetzwerk Spreewald	<a href="http://www.jobstarter.de/">http://www.jobstarter.de/</a> <a href="http://www.jobstarter.de/de/489.php?D=63&amp;F=0&amp;M=76&amp;V=list&amp;ZR=287">http://www.jobstarter.de/de/489.php?D=63&amp;F=0&amp;M=76&amp;V=list&amp;ZR=287</a>

	<b>Ausbildungsförderung.</b>				
Innovationsinitiative „Unternehmen Region“	Neben der Förderung von Forschung und Entwicklung in den spezifischen Fachprogrammen wurde im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eine an Regionen orientierte, themenoffene Innovationsförderung mit einem Bottom-up-Ansatz entwickelt. Sie umfasst die Program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li> <li>- Zentren für Kompetenzen</li> <li>- Innovationsforen</li> <li>- InnoProfile</li> <li>- ForMaT</li> <li>- InnoRegio</li> </ul>	Partner aus Wirtschaft, Wissenschaft und Bildung schließen sich in Innovationsbündnissen zusammen, um dadurch das regionale Kompetenzprofil zu stärken. Sie selbst definieren den inhaltlichen Schwerpunkt ihres Bündnisses – ausgehend vom Wirtschafts- und Forschungsprofil, von den Traditionen und den vorhandenen Fachkräften ihrer Region.	Im Rahmen der Innovationsinitiative „Unternehmen Region“ wurden für die neuen Länder folgende Förderschwerpunkte gezielt ausgebaut: In der zweiten Programmwelle der „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Auswahl von Konzeptionen für den Aufbau von Spitzenforschungszentren sowie zwei Auswahlrunden im neuen Verwertungsprogramm „For-MaT“.	Siehe unter den jeweiligen Einzelprogrammen	<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http://www.unternehmen-region.de/</a>
„Spitzenforschung und Innovation in den Neuen Ländern“	Der zwischen Bund und ostdeutschen Ländern vereinbarte „Dialog Innovation Ost“ bildet eine neue Form der strategischen Zusammenarbeit. Daraus erwuchs zunächst das Programm „Spitzenforschung und Innovation in den neuen Ländern“	Weiträumige, organisationsübergreifende, themenorientierte Kompetenzbündelung.  Stärkung der Innovationsfähigkeit in den neuen Länder	Einführung des Programms im Mai 2008 mit der Förderung erster Pilotprojekte	Insgesamt 17 Initiativ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 darunter: Greifswald - Campus PlasmaMed; Potsdam - GeoEn; Leipzig - IWAS	<a href="http://www.unternehmen-region.de/de/3899.php">http://www.unternehmen-region.de/de/3899.php</a>

문서 번호 58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및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와의 인터뷰

2010 년 10 월 7 일

담당자 / 기관: 가브리엘레 슈튀체베허; 라인홀트 라이츠후스터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시정부의 교육학술부 소속 장학관과의 인터뷰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동독 출신 교사들은 통일 이후 자격확인 절차(Bewährungsfeststellung)를 거쳐 신 연방주들 내에서 계속 교직을 이어나갔다. 단지 매우 적은 수의 교사들만이 그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교사들의 봉급은 연방이 정했는데, 그에 있어 동서독 지역 간의 차등 급여가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봉급 집단은 동독 지역 급여체계에 따라 처음에 단지 서독 지역 급여체계의 60 퍼센트 만을 받았다. 하지만 급여는 수년에 걸쳐 동·서독간에 균등하게 조정되도록 체계가 잡혔다. 다른 한편, 베를린에서는 직원들 간의 급여 균등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100% 달성되었다.

비록 교사들의 고용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1990 년도에 주교육청이 설립되고 교사의 고용을 중앙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되었다. 이 관청은 교사들을 베를린 전역에 있는 학교에 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서 베를린의 학교들 사이에 교사들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또한 교사들도 서로를 알 기회가 생겼다.

통일 후 베를린 전역에서 서베를린의 교과과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른 연방주들은 자신의 파트너 연방주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것을 받아들였다.

출처:





**Protokoll eines Gesprächs mit Frau Gabriele Stürzebecher und Herrn Reinhold Reitschuster**

**Berlin, 7. Oktober 2010**

Herr **Reinhold Reitschuster**, Oberschulrat, ist Referent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und politische Bildung. Herr Reitschuster und **Frau Gabriele Stürzebecher** sind für die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Berlin tätig.

**Kernaussagen des Gesprächs:**

1. Die meisten Lehrer aus der DDR führten ihre Lehrertätigkeit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 die Bewährungsfeststellung fort. Nur sehr wenige Lehrer wurden dabei als ungeeignet beurteilt. Die Besoldung der Lehrer wurde vom Bund geregelt, wobei die Trennung der Ost- und West-Tarife angewandt wurde. Beispielsweise bekam eine bestimmte Besoldungsgruppe nach dem Ost-Tarif am Anfang nur 60 % des Westtarifs. Der Tarif wurde jedoch über die Jahre zum Ausgleich zwischen West und Ost gestaffelt. In Berlin andererseits wurde der Tarifausgleich bei den Angestellten relativ schnell zu 100 % erreicht.
2. Obwohl die Einstellung der Lehrer Sache des Bezirks war, wurde ein Landesschulamt für die zentrale Einstellung 1990 gegründet. Diese Behörde versetzte die Lehrer in die Ost- und Westberliner Schulen. Dadurch ergab sich ein Lehreraustausch zwischen Ost- und West-Berliner Schulen, und die Lehrer konnten sich gegenseitig kennenlernen.
3. In Gesamt-Berlin wurden die Lehrpläne von West-Berlin schlichtweg übernommen. Die anderen Bundesländer übernahmen die Lehrpläne von den Partnerländern, zum Beispiel Brandenburg diejenigen von Nordrhein-Westfalen.

## **Gesprächsinhalt**

### *1. Regelung zur Lehreraufbahn*

Die meisten Lehrer aus der DDR führten ihre Lehrertätigkeit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urch die Bewährungsfeststellung fort.

Die Bewährungsfeststellung wurde im Einigungsvertrag angedeutet und nach dem 3. Mantelgesetz bzw. Laufbahngesetz geregelt. Demnach wurde die Qualifikation der Lehrer für die weitere Lehrertätigkeit in ihrem einstündigen Unterricht von einer Arbeitsgruppe, die aus 10 Personen bestand und den Unterricht beobachtete, beurteilt. Dadurch wurden die Lehrer verbeamtet. Nur sehr wenige Lehrer wurden dabei als ungeeignet beurteilt. Trotzdem wurden sie nicht entlastet, sondern als Angestellte eingestellt. Manche wurden durch die Überprüfung der Stasi-Behörde entlassen.

Die Lehrerbefähigung wurde in vier Kategorien unterteilt, während es in der DDR viele Möglichkeiten gab.

Die Besoldung der Lehrer wurde vom Bund geregelt, wobei die Trennung der Ost- und West-Tarife angewandt wurde. Beispielsweise bekam eine bestimmte Besoldungsgruppe nach dem Ost-Tarif am Anfang nur 60 % des Westtarifs. Der Tarif wurde jedoch über die Jahre zum Ausgleich zwischen West und Ost gestaffelt. In Berlin andererseits wurde der Tarifausgleich bei den Angestellten relativ schnell zu 100 % erreicht.

Relevante Dokumente:

- a) Greifswalder Beschluss von 1993
- b) Zweite Verordnung über besoldungsrechtliche Übergangsregelungen nach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von 1993
- c) Mantelgesetz (Laufbahngesetz)

### *2. Landesschulamt: Zentrale Einstellung der Lehrer*

Obwohl die Einstellung der Lehrer Sache des Bezirks war, wurde ein Landesschulamt für die zentrale Einstellung 1990 gegründet. Diese Behörde versetzte die Lehrer in die Ost- und Westberliner Schulen. Dadurch ergab sich ein Lehreraustausch zwischen Ost- und West-Berliner Schulen, und die Lehrer konnten sich gegenseitig kennenlernen.

### *3. Lehrpläne*

In Gesamt-Berlin wurden die Lehrpläne von West-Berlin schlichtweg übernommen. Die anderen Bundesländer übernahmen die Lehrpläne von den Partnerländern, zum Beispiel Brandenburg diejenigen von Nordrhein-Westfalen.

Berlin ist ein Sonderfall. Für den koreanischen Fall ist es mitunter angebrachter, die Fälle der anderen neuen Bundesländer zu untersuchen.

문서 번호 59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와의 인터뷰

2010 년 10 월 7 일

담당자 / 기관: 베를린 자유대 페터 마싱 교수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의 페터 마싱교수와의 인터뷰이다. 마싱교수는 독일 정치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이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 년에서 1995 년까지의 기간은 교사의 추가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다.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에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이 포함된 국가시민 교과가 존재했다. 통일이 교육부문 전체를 개혁할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보아 서독의 체제가 동독지역으로 그대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주들 간의 파트너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속교육 기회는 지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었다. 그 이유가 모든 교사들을 추가교육 시키기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추가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출처:



**Protokoll eines Gesprächs mit Professor Dr. Peter Massing, Freie Universität Berlin**  
**Berlin, 7. Oktober 2010**

Prof. Dr. **Peter Massing** (\*1946 in Dessau) hat seit 2002 eine Universitätsprofessur für Sozialkunde und Didaktik der Politik am Fachbereich Politik- und Sozialwissenschafte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inne. Von 1989 bis 2004 war er Leiter des Referats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Die Jahre 1990 bis 1995 waren eine große Phase der Lehrerfortbildung. Professor Massing hat auch mehrfach zu dem Thema publiziert, siehe unter anderem seinen Aufsatz „Politikwissenschaftliche Fort- und Weiterbildung“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chriftenreihe Band 313, Lernfeld Politik, Eine Handreichung*.

Anders als in der Bundesrepublik gab es an DDR-Schulen das Ideologie-vermittelnde Fach Staatsbürgerkunde.

Im Februar 1990 gab es zum ersten Mal – 6 Wochen lang – Fortbildungen für Staatskunde-Lehrer. Später wurden fast alle von ihnen abgewickelt, nur 2 wurden übernommen.

Gesellschaftskunde wurde als neues Fach eingeführt.

Viele sahen die Wiedervereinigung als Chance, das Bildungswesen zu reformier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wurde entgegnet, daß man das dreigliedrige West-System mit Gymnasium, Realschule und Hauptschule 1:1 übernehmen wolle, weil sonst später die Ost-Schulabsolventen Nachteile bei der Anerkennung von Abschlüssen haben würden. Reforminteressierte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konnten sich nicht durchsetzen.

Letztlich war die Partnerschaft zwischen dem alten und dem neuen Bundesland ausschlaggebend. Allgemein wurde mehr oder weniger das System vom alten Bundesland auf das Partnerland im Beitrittsgebiet übertragen.

Es wurden Arbeitsgruppen mit Hochschulvertretern, Vertretern von Landesschulämtern und Landesinstituten für Schule und Medien zusammengesetzt.

Weiterbildungen wurden über 3 Semester freiwillig angeboten und richteten sich an Lehrer der Fächer Staatsbürgerkunde, Geographie, Geschichte und Russisch. Ruischlehrer wollten meistens noch ein zweites Fach dazulernen. In Berlin machte man im Vergleich zum übrigen Bundesgebiet bei Staatsbürgerkunde eine Ausnahme und wickelte nicht gleich alle Lehrer ab, sondern gab einigen durch wahrgenommene Weiterbildung eine zweite Chance. Die Teilnahmebereitschaft war groß: In Berlin nahmen 500 bis 600 Lehrer Fortbildungen wahr, im gesamten Bundesgebiet waren es zwei- bis dreitausend. Anfangs wurden die Fortbildungen vo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vom Institut für Gesamtdeutsche Fragen finanziert; dann hieß es, Bildung sei Ländersache, aber als sie dann in die Obhut der Länder gegeben wurde, hörten die Fortbildungen rasch auf.

Die Teilnahme an Fortbildungen war freiwillig. Diese Regelung beruhte einerseits auf einem demokratischem Prinzip, andererseits, weil nicht genug Geld dagewesen wäre, alle Lehrer fortzubilden.

Auftretende Probleme waren, daß Lehrer einerseits noch zu marxistisch-leninistisch geprägt waren, oder daß sie dachten, alles sei erlaubt (und nicht einschränken, wenn Schüler rechts- oder linksextreme Parolen im Klassenzimmer propagierten). Schwierigkeiten entstanden auch dadurch, daß Ost-Lehrer unterschiedliche Vorstellungen von Disziplin hatten als West-Schüler, und Ost-Lehrer auch andere Sanktionsmöglichkeiten als West-Lehrer gehabt hatten.

Die Resultate der Arbeitsgruppen waren nur Empfehlungen, im Endeffekt wurde vieles nicht bedacht, und der Berliner Senat hatte die letzte Entscheidungsgewalt.

Die Resonanz der Lehrer, die an Fortbildungen teilnahmen, war größtenteils positiv, nur im Bereich Geschichte war man manchmal unterschiedlicher Ansicht.

Das BIL (Berliner Institut für Lehrerbildung) oder das LISUM (Landesinstitut für Schule und Medien) in Ludwigsfelde waren Standorte, wo Lehrerfortbildungen stattfanden, ebenso in der Europäischen Akademie, im Jagdschloß Glienicke oder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Das Engagement der Fortbildenden war ehrenamtlich. Größtenteils haben Politikwissenschaftler, Politikdidaktiker und Fachseminarleiter unterrichtet.

Die Deutsche Gesellschaft und die 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kwissenschaftler hatte einen Pool an Referenten von westdeutschen Universitäten gebildet, aus dem dann die Bundeszentrale vermittelt hat.





문서 번호 60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원의 첫 10 년

2011 년

담당자 / 기관: 베르너 쿤첼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주정치교육원 설립 10 주년을 기념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로 설립된 직후에 브란덴부르크주 주총리실에 임시로 구성된 “정치교육” 위원회가 존재했다. 주정치교육원은 인권운동가 한스-유르겐 미셀비츠의 주도하에 1992 년 7 월 1 일에 공식으로 발족하였다. 설립 단계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공식적인 자매결연 파트너였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정치교육원으로부터 물질·인적 지원을 받았다.

1991 년도 하반기에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예산 중 주정치교육원의 행정비용을 위해 109 만 마르크, 정당재단과 사립 운영주체의 업무 지원을 위해 보조금으로 450 만 마르크가 각각 지출되었다. 1992 년도까지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주민 1 인당 정치교육을 위해 2.6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국민 일인당 지출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방정치교육원이 0.92 마르크, 베를린 0.82 마르크, 작센주가 0.34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그것은 브란덴부르크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정치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 년도의 경우 브란덴부르크주는 1 인당 2.12 마르크를 정치교육 지원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1991 년도에는 책정된 총 551 만 마르크 중 단지 323 만 마르크만이 지출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인구밀도가 낮기에 주정치교육원 단독으로 전역을 포괄하는 교육기회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정치교육원은 100 여개가 넘는 다양하고도 민간 운영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나아가 학교, 종합대학 그리고 예를 들어 주의회와 같은 정치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993 년도에는 약 560 만 마르크의 재원이 지원될 수 있었는데, 1999 년도에는 약 410 만 마르크 밖에 되지 않아 운영주체들의 역량 발휘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법적으로 지원대상인 정당 재단 및 기초지자체 정치재단의 수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 운영주체들이 이러한 감축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1995 년도에서

1998 년도까지 지원 재원의 약 40%가 감축되었다. 앞으로도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교육 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감축해야만 한다.

출처: [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http://www.politische-bildung-brandenburg.de/sites/default/files/downloads/20jahre_politische_bildung_brandenburg.pdf) (Stand: 15.6.2015)

# Das erste Jahrzehnt der Brandenburg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1. Die Bedeutung politischer Bildung im neuen Land Brandenburg

### 1.1 Notwendigkeit politischer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Die politische Bildung als Teil des öffentlichen Bildungsauftrages hat die Aufgabe, objektive Informationen über Faktoren und Funktionszusammenhänge politischer Prozesse und die Grundwerte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zu vermitteln. Sie soll die Fähigkeit und die Bereitschaft ausbilden, verantwortlich und selbstbestimmt am demokratischen Gemeinwesen mitzuwirken und durch aktive Teilnahme die freiheitliche Ordnung mitzutragen. Politische Bildung zeigt die den einzelnen Sachverhalten innewohnenden Kontroversen und verschiedenen Perspektiven auf, schließt Indoktrinationen und vorgegebene Meinungen aus und will zu selbständigen Urteilsfindungen befähigen. Die demokratischen Werte stehen jedoch niemals zur Disposition. Mit dieser konzeptionellen Grundausrichtung haben die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im außerschulischen Jugend- und Erwachsenenbereich eine Schlüsselfunktion. Die tradierten Inhalte politischer Bildung, die sich über Jahrzehnte in der Bundesrepublik herausgebildet und bewährt hatten, prägten auch die Funktionen der Landeszentralen in den neuen Ländern. Das Gedankengut politischer Bildung erhielt aber hier ein größeres Gewicht, weil es durch bloß verbalen Gebrauch und ideologische Instrumentalisierung häufig eine Sinnentstellung erfahren hatte. Darüber hinaus wurde das Aufgabenspektrum der politischen Bildung im Osten durch die spezifische politische Situation ergänzt.

Nach dem Ende weltanschaulicher Indoktrination bestand in den neuen Ländern ein erhebliches staatlich getragenes Interesse daran, rasch die Aufmerksamkeiten der Bürger auf politische Sachverhalte zu lenken, politische Kenntnisse, Einsichten und Urteilsvermögen zu wecken bzw. zu erweitern. Zugleich bestand nach den politischen Veränderungen im Osten ein erheblicher Informationsbedarf über die Funktionsmechanismen der neuen Ordnung. Die politische Bildung musste sich deshalb der Aufgabe stellen, Kenntnisse über die komplizierten modernen politischen Prozesse und ihre Normen, über die rechtsstaatlichen Institutionen und die weitgehend unbekannt Strukturen der vertikalen und horizontalen Gewaltenteilung als Voraussetzung für den Umgang mit ihnen zu vermitteln sowie das Wechselverhältnis zwischen Freiheit und Verantwortung, zwischen legitimer Herrschaft und demokratischer Teilhabe zu verdeutlichen. Zugleich hatte die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uch dem durchaus vorhandenen politischem Desinteresse entgegenzuwirken und die Bereitschaft und den Mut für aktives eigenverantwortliches Handeln und für Beteiligung an einer pluralistischen Streitkultur mit Meinungsvielfalt und Achtung vor anderen Ansichten und an demokratischen Entscheidungsprozessen zu wecken und zu fördern sowie die dem mündigen Bürger verfügbaren Möglichkeiten deutlich zu machen, sich zu engagieren und politische Verantwortung zu übernehmen. Dies setzte die Kenntnis und Akzeptanz der Regelungsabläufe, aber auch die Schwierigkeiten politischen Handeln in demokratischen Abstimmungs- und Entscheidungsabläufen voraus.

Unter den Bedingungen des abrupten Übergangs von Diktatur zur Demokratie, von zentralistischer Plan- zu sozialer Marktwirtschaft mit all seinen Problemen für die Betroffenen war dies eine gleichermaßen komplexe wie komplizierte Aufgabe. Zumindest in der unmittelbaren Umbruchphase galt es auch, dem verbreiteten Misstrauen gegenüber Politik und auch politischer Bildung zu begegnen. Wurde doch politische Bildung unter dem Eindruck von jahrzehntelanger Erfahrung zumindest anfänglich mit Indoktrination

gleichgesetzt. Nach dem Erleben des Schulfachs „Staatsbürgerkunde“, von „Parteilehrjahren“ oder gewerkschaftlichen „Schulen der sozialistischen Arbeit“ mit abverlangtem „Klassenstandpunkt“ neigten viele zu politischer Neutralität, zu Skepsis oder Hinwendung zu materiellen Werten. Politische Bildung musste deshalb stets durch ihr Handeln für jedermann sichtbar machen, dass sie nicht als Sprachrohr der jeweiligen Landesregierung agierte.

Bei der Bewältigung ihrer Aufgaben hatte die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zu berücksichtigen, dass die Systemtransformation für viele Menschen mit Schwierigkeiten verbunden waren, die sie in einem solchem Umfang nicht erwartet hatten. Die Problemtiefe hatte einen materiellen Aspekt, in Brandenburg insbesondere in der Peripherie des Landes, wo jeder vierte Erwerbfähige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war. Demokratieerdruss war auch entstanden, weil sich Ostdeutsche infolge der komplizierten Abläufe der Transformation und der Auflösung sozialer Milieubindungen unerwartet in einer Minderheitensituation mit ungelöster Identitätsbindung und Unterschätzung ihrer individuellen Lebensleistung sahen. Bei der Suche nach einem neuen Grundwertekonsens entstand nicht selten eine Idealisierung der DDR-Sozialisation, die zugleich die generelle Atmosphäre des Misstrauens gegenüber der Politik weiterwirken ließ, nicht zuletzt, weil sich unter den neuen Verhältnissen Wahlversprechen nicht zwangsläufig in politischen Entscheidungen wiederfanden. All dies verstärkte ambivalente Haltungen gegenüber demokratischen Werten, vertiefte transformationsüberdauernde Vorbehalte gegenüber der Politik und förderte Gewaltakzeptanz, besonders unter Jugendlichen.

Die Gesamtheit dieser Problemfelder erschwerte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und forderte ihre Akteure zugleich heraus. Sie bestimmte Inhalte und Wirkungsschwerpunkte der politischen Bildung in Brandenburg. Es galt nun, Methoden und Strukturen zu entwickeln, die der Situation im größten unter den neuen Ländern entsprachen.

## 1.2 Impulse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Die Landeszentralen im Osten Deutschlands Ländern konnten auf den Erfahr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alten Ländern aufbauen. Sie empfingen wertvolle Anregungen für die Inhalte ihrer Arbeit, für ihren überparteilichen Status und für die methodische Vielfalt ihrer Aktivitäten. Doch gaben sie auch ihrerseits der politischen Bildung im vereinten Deutschland neue inhaltliche Impulse vor allem in dreierlei Hinsicht.

Erstens: Die tief greifenden politischen Veränderungen in den letzten Monaten der DDR waren Höhepunkte der deutschen Demokratiegeschichte. Mit machtvollen Aktionen wie der Besetzung der Stasizentralen hatten die Menschen unmittelbare politische Macht ausgeübt und diese in neuen demokratischen Formen wie den Runden Tisch etabliert. Diese Methoden des unmittelbaren Vollzugs von politischem Willens und das Gedankengut der Bürgerbewegung bereicherten die Demokratieentwicklung und fanden auch in den Inhalten der politischen Bildung ihren Niederschlag. Direkte Demokratie wurde verstärkt in den Publikationen und anderen Bildungsangeboten aller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thematisiert. So behandelte die dritte von den Zentralen politischer Bildung gemeinsam erarbeitete Publikation das Thema „Direkte Demokratie in den deutschen Ländern“. Ferner wurden diese Fragen in den Schriften jener Zentralen vermehrt behandelt, deren Landesverfassungen direkt-demokratische Elemente neu ausgestalteten.

Zweitens: Neue Gesichtspunkte gingen auch in das von den Zentralen der alten Länder angebotene historische Schriftgut ein. Dieses hatte zwar – im Unterschied zu anderen Publikationen – die deutsche Geschichte in ihrer ganzen Komplexität behandelt, z. B. in den

Schriften von Christoph Kleßmann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Dennoch erfuhren neue Aspekte seit 1990 eine signifikante Intensivierung. Facetten des Alltagslebens unter den Bedingungen der SED-Diktatur wurden deutlich, die vor allem den Menschen in den alten Ländern so konkret nicht bewusst waren. Eine Vielzahl ostdeutscher Autoren, darunter auch Brandenburger, präsentierten Themen im Schriftenangebot aller Bildungszentralen, die zeigten, wie Alltags- mit Diktatur- und Widerstandsgeschichte eng verflochten war. Exemplarisch für viele andere stehen Stefan Wolles „Heile Welt der Diktatur“ oder Erhard Neuberts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Drittens: Nicht nur die Entwicklung in Deutschland, auch die Demokratisierung in den Ländern des ehemaligen Ostblocks bereicherte seit 1990 die inhaltliche Palette der politischen Bildung. Der Demokratisierungsprozess in den meisten dieser Staaten war verbunden in deren Einbindung in die fortschreitende europäische Integration. In dem Maß, in dem die beiden Entwicklungsprozesse ineinander übergingen, entstand ein wachsendes Bedürfnis nach Informationen über diese Länder, über die vor allem in den alten Bundesländern ein Kenntnisdefizit herrschte, umso mehr als mit dem Zerfall der Sowjetunion, Jugoslawiens und der Tschechoslowakei viele neue Länder auf der Landkarte auftauchten. Alle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machten deshalb osteuropäische Themen zu einem wichtigen Bestandteil ihres Publikations- und Veranstaltungsangebots. Ein Schwerpunkt in diesem thematischen Komplex wurden die widerspruchsvollen deutsch-polnischen Beziehungen und die Suche nach Wegen zu einer guten Nachbarschaft im Rahm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Die Materie betraf – geografisch und historisch bedingt - insbesondere Brandenburg, das dank seiner Beziehungen zu polnischen Partnern vielerlei Erfahrungen in den Umgang mit dem Thema einbringen konnte. So war es z. B. wohlbegründet, dass die Bundeszentrale ihre hochrangige internationale Konferenz „Westverschiebung Polens – Komplex der Vertreibung – Heimat in Europa“ im April 1998 im Brandenburger Ort Wandlitz abhielt.

## 2. Die Errichtung der Brandenburg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2.1 Die Anfänge

Erste Initiativen für die Institutionalisierung politischer Bildung gab es bereits während der Vorbereitung des Einigungsvertrages. Am 9. Juli 1990 wandte sich der Bildungsminister der DDR Hans-Joachim Meyer an den Bundesinnenminister Wolfgang Schäuble mit der Anregung, noch vor der Konstituierung der neuen Länder die Gründung von Landes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nach dem Muster der alten Länder vorzubereiten. Er regte die Benennung von Beratern an. Bei einem Vorgespräch hätten „leitende Herren“ der Bundeszentrale Bereitschaft dazu angedeutet. Wenngleich Schäuble daraufhin im August 1990 zwei Mitarbeiter seines Ministeriums als Ansprechpartner benannte, kamen diese Gespräche nicht mehr zustande, weil inzwischen die deutsche Einheit vollzogen war.

Schon wenige Wochen nach der Bildung des neuen Landes Brandenburg existierte bei der Staatskanzlei als Provisorium ein Referat Politische Bildung unter dem Referatsleiter Friedrich Bode. Zugleich wurde i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ine Konzeption für die Errichtung von Landes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erarbeitet. Der Aufbau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egann im Februar 1991, im März 1991 wurde ein Referat als Aufbaustab formell gebildet.

Mit dem Aufbau der Landeszentrale wurde auf Vorschlag von Ministerpräsident Manfred Stolpe der Bürgerrechtler Hans-Jürgen Misselwitz beauftragt. Dr. Misselwitz ist Biochemiker. Nach Verlust seiner Anstellung an der Humboldt-Universität nahm er ein Theologiestudium

auf. Schon früh engagierte er sich in der Bürgerrechtsbewegung. 1981 gründete er mit seiner Frau Ruth und anderen den Friedenskreis Pankow.

Unter der Leitung von Hans Misselwitz blieb neben der demokratischen Ordnung des Grundgesetzes das Gedankengut der Bürgerrechtsbewegung ein wichtiger konzeptioneller Faktor für die Arbeit der Landeszentrale. Auch insofern war politische Bildung in Brandenburg kein bloßes Kopieren der Landeszentral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sondern behielt eine an den Bedingungen des eigenen Landes orientierte Spezifik.

Das als Aufbaustab fungierende Referat nahm bereits vor der offiziellen Gründung der Landeszentrale – gemäß § 12 LOG am 1. Juli 1992 – Aufgaben der politischen Bildung wahr. Es förderte gesellschaftliche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und deren Maßnahmen, führte Veranstaltungen durch und beriet Multiplikatoren. Dafür war es mit beträchtlichen Haushaltsmitteln ausgestattet. Im zweiten Halbjahr 1991 wies der Landeshaushalt für sächliche Verwaltungsaufgaben der Landeszentrale 1,09 Mill. DM und an Zuschussmitteln für die Arbeit politischer Stiftungen und freier Träger 4,5 Millionen DM aus. Bei dieser üppigen Ausstattung blieb es auch 1992. Pro Kopf der Bevölkerung standen in Brandenburg für politische Bildung mit 2,60 DM im Bundesvergleich die mit Abstand meisten Mittel zur Verfügung, gefolgt von der Bundeszentrale mit 0,92 DM und Berlin mit 0,82 DM, unter den neuen Ländern von Sachsen mit 0,34 DM. Trotz Kürzungen nahm Brandenburg mit 2,12 DM pro Kopf auch 1993 noch den Spitzenplatz ein. Allerdings relativiert sich der Vergleich, weil in der Ausbauphase der Landeszentrale und der Trägerlandschaft zwischen den geplanten und den realen Ausgaben eine beträchtliche Diskrepanz bestand. So wurden 1991 statt der angesetzten Gesamtmittel von 5,51 Mill. lediglich 3,23 Mill. DM ausgegeben. Außerdem waren in anderen Ländern die Fördermodalitäten anders geregelt, so dass z. B. in Sachsen sämtliche Mittel der Landeszentrale für deren Sacharbeit verwendet wurden. Dies waren im Jahr 1993 1,86 Mill. DM, während in Brandenburg im selben Jahr nur 0,95 Mill. DM in Sachausgaben flossen, in die Förderung hingegen 5,58 Mill. DM, davon allein in die parteinahen Stiftungen 2,82 Mill. DM und in die parteinahen kommunalpolitischen Stiftungen 1,38 Mill. DM.

Die Landeszentrale begann ihre Arbeit mit zwei Personen: dem Leiter und einer Mitarbeiterin des gehobenen Dienstes. Vorübergehend wurde die Personalkapazität durch die Abordnung von zwei Bundesbediensteten aufgestockt. Im Laufe des Jahres 1992 wurden weitere Mitarbeiter für die im Aufbau befindlichen Fachbereiche eingestellt.

## 2.2 Aufbauhilfe durch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 und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 der Phase des Aufbaus leistete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es Partnerlandes Nordrhein-Westfalen materielle und personelle Starthilfe. Sie basierte auf dem Abkommen über umfassend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Landesregierungen Nordrhein-Westfalen und Brandenburg vom 27. November 1990 und einer darauf basierenden Verwaltungsvereinbarung zwischen den beiden Landesregierungen vom Juli 1991, die auch die Kooperation in der politischen Bildung zum Inhalt hatte. Doch lange vor dieser Vereinbarung wurde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r Düsseldorfer und der im Entstehen begriffenen Potsdam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mfassend praktiziert. Anhand der eigenen Erfahrungen übermittelten die Kollegen aus Düsseldorf bereits am 15. Januar 1991 Vorschläge, die für die Errichtung der Landeszentrale in Potsdam bedeutende Anregungen waren, jedoch nicht adäquat übernommen, sondern unter den Bedingungen Brandenburgs ausgestaltet wurden. Diese Empfehlungen betrafen sowohl grundsätzliche

Probleme der politischen Bildung wie Themenschwerpunkte oder Zielgruppen als auch konkrete Einzelfragen wie die Bildung von Fachbereichen, die organisatorische Zuordnung zur Staatskanzlei oder die Bildung eines Parlamentarischen Beirates.

Neben den Ratschlägen kam von der Zentrale des Partnerlandes auch konkrete Unterstützung. So wurden Seminare für bestimmte Brandenburger Zielgruppen in Nordrhein-Westfalen durchgeführt. Etliche der im Aufbau begriffenen freien Träger erhielten aus Düsseldorf über die Brandenburger Landeszentrale eine finanzielle Starthilfe. Als der Fachbereich 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noch im Aufbau begriffen war, stellte die Partnerzentrale den Brandenburger Schulen und Bibliotheken unentgeltlich eine Grundausrüstung an Literatur zur Verfügung. Doch nicht nur die Bildungsinstitutionen, sondern sämtliche Einwohner Brandenburgs wurden in dieser Übergangszeit wie „Landeskinder“ behandelt und konnten in Düsseldorfs kostenlose Literatur bestellen. Auch audiovisuelles Arbeitsmaterial war zu erhalten. Insbesondere unter Lehrern und anderen Fachleuten sprach sich dieses Angebot rasch herum und wurde gern angenommen.

Auch das Know-how aus Nordrhein-Westfalen konnte die Potsdamer Landeszentrale nutzen. So entstand die Broschüre „Eine Verfassung für unser Land“ für den Volksentscheid über die Landesverfassung 1992 in einer rasanten, kombinierten Aktion, da nur wenige Tage zur Verfügung standen.

Wichtig für den Aufbau der Landeszentrale war auch die personelle Hilfe. Kollegen aus Düsseldorf kamen in der Gründungsphase und auch später nach Potsdam und stellten ihre Erfahrungen zur Verfügung. Einige von ihnen gingen danach wieder zurück, andere fanden in Brandenburg eine dauerhafte neue Heimat.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Kollegen aus Ost und West verlief in einem guten kollegialen Verhältnis, doch nicht immer frei von Kontroversen.

Die Zusammenarbeit zwischen Potsdam und Düsseldorf behielt Bestand, auch als sich die Brandenburger Landeszentrale etabliert hatte und erfolgreich arbeitete. Im Jahresturnus fanden Kooperationstreffen statt, die grundsätzliche Problemlagen der politischen Bildung berieten, Erfahrungen der Fachbereiche austauschten und weitere gemeinsame Maßnahmen verabredeten. Noch über viele Jahre führten die beiden Landeszentralen Kooperationsveranstaltungen durch.

Nicht nur von der Landeszentrale aus Nordrhein-Westfalen, auch vo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kam Hilfe. Schon Anfang 1990, also lange vor dem Vollzug der deutschen Einheit hatte sie eine Konzeption für die Bildung der Landes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im Osten erarbeitet. Später bot sie für Bildungsträger und Interessenten aus den neuen Ländern Seminare, Studienfahrten und andere Bildungsveranstaltungen an. Mit den „Informationen für politische Bildung“, beliebt als „schwarze Hefte“, und den Beilagen zur Wochenzeitschrift „Das Parlament“ wurden die neuen Landeszentralen kostenlos in großen Stückzahlen beliefert. 1992 stellte die Bundeszentrale im Rahmen eines Sonderprogramms zur Förderung der deutschlandpolitischen Bildungsarbeit Mittel für junge Träger in den neuen Ländern bereit. Dazu gehörten die Berlin-Brandenburgische Auslandsgesellschaft, der Potsdamer Verein für Demokratie, politische und kulturelle Bildung und drei weitere Träger aus dem Land Brandenburg.

Sehr hilfreich waren auch die Publikationen und Filme, die das *Gesamtdeutsche Institut* aus seinen Beständen für Zwecke der politischen Bildung in großem Umfang bereitstellte. Sie gingen vor der Bildung der Landeszentralen direkt an die für die Lehrerfortbildung

zuständigen Kreisbehörden und bereicherten später die Publikationsbestände der Landeszentralen.

Förderlich für die Brandenburger Landeszentrale waren auch die Anregungen durch die enge Zusammenarbeit mit den Berliner Kollegen.

### 2.3 Aufbau der Fachbereiche

Die Vorschläge der Partnerzentrale aus Nordrhein-Westfalen für die Errichtung der Landeszentrale benannten auch einzelne Fachbereiche, die zum Kernbereich der Arbeit von Landeszentralen in den alten Ländern gehörten. Über die dort genannten Wirkungsschwerpunkte Veranstaltungen, Publikationen und Förderung politischer Bildung hinaus wurden in den Gründungsprozess der neuen Landeszentrale in Brandenburg von Anfang an auch die mannigfachen Möglichkeiten einbezogen, die kulturelle Medien für die Gestaltung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boten. Ausstellungen, Konzerte, Podiumsdiskussionen und andere Veranstaltungen mit Künstlern, Belletristik oder Filme sollten – neben den traditionellen Medien – bald das Erscheinungsbild der Potsdamer Landeszentrale prägen.

In der Entstehungsphase der Landeszentrale widmeten sich alle Mitarbeiter fachlich übergreifenden Aufgaben, so dass schon in der Frühzeit interessante Publikationen entstanden, eine fundierte Fördertätigkeit ausgeübt und Veranstaltungen „vor Ort“ durchgeführt werden konnten.

Erste Überlegungen des Leiters zur Fachbereichsstruktur vom August 1991 ließen bereits die spätere Organisation der Landeszentrale sichtbar werden:

Fachbereich 1: Organisatorische und koordinierende Angelegenheiten innerhalb der Landeszentrale, Öffentlichkeitsarbeit (einschließlich Haushaltsangelegenheiten, Zentrale Veranstaltungen, Ausstellungen)

Fachbereich 2: Förderung und Angelegenheiten der politischen Bildung bei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sowie Angelegenheiten der europapolitischen Bildungsarbeit

Fachbereich 3: Angelegenheiten der politischen Bildung mit Verbänden, Organisationen, besonderen Gruppen und Bereichen (Jugendbildung, Schulen, Bundeswehr u. a.)

Fachbereich 4: Kultur, Medien und Audiovisuelle Arbeitsmittel

Fachbereich 5: Publikationen

Mit wenigen Modifizierungen wurden die Fachbereiche mit diesen Schwerpunktsetzungen ausgebaut. Zugleich wurden Mitarbeiter mit speziellen fachlichen Kenntnissen für die im Entstehen begriffenen Fachbereiche gewonnen. Diese bildeten sich aus dem Arbeitsablauf heraus, so dass ein formeller Gründungsakt der Fachbereiche nicht erfolgte. Im Oktober 1992 war die personelle Ausstattung der Fachbereiche zu einem gewissen Abschluss gelangt. Dennoch gab es – vor allem in den Bereichen Förderung und Zielgruppenarbeit – weiterhin personelle Defizite, deren Ausgleich in den Folgejahren vom Leiter der Landeszentrale immer wieder erfolglos angemahnt wurde. Ein Vergleich mit Landeszentralen etwa gleich großer Länder verdeutlicht die Situation. So hatte die Landeszentrale von Sachsen-Anhalt 1994 18 Mitarbeiter, genau doppelt so viel wie die Landeszentrale in Brandenburg. Der geringe Personalbestand blieb ein Dauerproblem.

Die Fachbereichsstruktur wurde bis 1996 vervollkommen. Einzelne Zuständigkeiten wechselten. Ein eigener Fachbereich war bereit seit 1993 für Grundsatzfragen der politischen Bildung sowie für Konferenzen und Kolloquien zuständig. Die neuen Medien, deren wachsendes Gewicht auch in der politischen Bildung zu jenem Zeitpunkt absehbar war,



wurden der Verantwortung eines Fachbereichsleiters zugewiesen. Es bestanden nunmehr die fünf Fachbereiche:

- Fachbereich 1: Grundsatzfragen der politischen Bildung
  - internationale und überregionale Zusammenarbeit
  - zentrale Veranstaltungen, Konferenzen, Kolloquien
- Fachbereich 2: Förderung von politischen Bildungsmaßnahmen
- Fachbereich 3: Seminare für Zielgruppen/Multiplikatoren
  - Landeshauptstadtseminare für kommunale Führungskräfte
  - Internationale/europäische Lehrerseminare
  - Entwicklung von Pilotprojekten der Politikvermittlung
  - Neue Medien/Informationstechnologien
  - Multiplikatoren für den ländlichen Raum
- Fachbereich 4: Werkstätten und Ausstellungen zu Politik und Kultur
  - Themenzentrierte Schulmodelltage der politisch-sozialen Bildung
  - Produktion und Aufkauf von audiovisuellen Medien
  - Interkulturelle Projekte
  - Öffentlichkeitsarbeit: Präsentation und Gestaltung politischer Bildungsangebote
- Fachbereich 5: Eigene Publikationen
  - Auswahl und Versand von politischer Literatur

Durch personelle Veränderungen war 1999 die Zahl der Fachbereiche auf vier reduziert. Die Fachbereiche wurden außer ihrem methodischen Aufgabenspektrum nunmehr auch in inhaltlichen Schwerpunktsetzungen definiert. Die so ersichtlichen Kompetenzen flossen in die gesamte Arbeit der Landeszentrale und vor allem in die inhaltliche Beurteilung der Förderanträge ein. Die Fachbereichsstruktur wies nunmehr das folgende Bild auf:

- Fachbereich 1: Förderung, Haushalt und Grundsatzangelegenheiten
  - Fachbereich 2: Politikvermittlung (hierzu gehörten auch die Weiterführung der entsprechenden Veranstaltungsreihen und der Kooperationsveranstaltungen)
  - Fachbereich 3: Zielgruppenarbeit, Neue Medien
  - Fachbereich 4: Publikationen
- Öffentlichkeitsarbeit, Ausstellungen und Controlling waren unmittelbar der Leitung zugeordnet.

#### 2.4 Bewährung: die Landeszentrale in der Verfassungsdiskussion

Am 14. Juni 1992 stimmten die Brandenburger als ers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über die Verfassung ihres wiedererstandenen Landes ab. In den Monaten vor dem Volksentscheid wurde eine engagiert geführte öffentliche Debatte geführt. Die zu jener Zeit weitgehend etablierte Landeszentrale war in der Lage und verstand es als ihre Pflicht, in diesen Diskurs einzugreifen.

Ihre Aktivitäten mussten dabei zwei Ansprüchen gleichermaßen gerecht werden. Einerseits wurde von ihr als Organisationseinheit einer obersten Landesbehörde zu Recht erwartet, dass sie ihre materiellen und personellen Ressourcen in den Dienst dieses landespolitisch bedeutsamen Vorhabens stellte. Andererseits durfte politische Bildung keinesfalls als offizielles Sprachrohr verstanden werden, sondern musste auch in Bezug auf die Verfassungsdiskussion ihrem Auftrag gerecht werden, die Bürger anzuregen und zu unterstützen, in eigener Verantwortung und in Kenntnis der komplexen Materie eigenständig und sachkundig zu entscheiden. Wie sie diesen beiden Komponenten gerecht wurde, zeigt die

Broschüre, die in der Landeszentrale entstand und in recht großer Auflage für die öffentliche Verfassungsdiskussion hergestellt wurde.

## 2.5 Einziges Landeszentrale ohne Errichtungserlass

Alle Aktivitäten leistete die Landeszentrale über Jahre hinweg ohne einen formellen Errichtungserlass. Bereits vom Juni 1991 datierte der erste Entwurf eines Erlasses, gegen den die Ressorts jedoch Bedenken vorlegten; so befürchtete das 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ltur „mangelnde Unabhängigkei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inwände unterbreitete der Chef der Staatskanzlei am 28. August 1991 eine Kabinetttvorlage, die jedoch zurückgestellt wurde.

Trotz der fehlenden formalen Legitimierung mittels Organisationserlass entwickelte die Landeszentrale während einer Aufbauphase von etwa einem Jahr ihre inneren Strukturen und präsentierte erste erfolgreiche Arbeitsergebnisse. Ferner legitimierten einschlägige gesetzliche Regelungen sie als konstitutiven Bestandteil der Exekutive: die Haushaltsgesetze, das Weiterbildungsgesetz, die Bekanntmachung der Geschäftsbereiche der obersten Landesbehörden und vor allem die Förderrichtlinie. Es sollten noch vier Jahre vergehen, bis dem Mangel abgeholfen war.

## 2.6 Der Organisationserlass vom September 1998

Angesichts des ausstehenden Errichtungserlasses bestand hinsichtlich Status, Funktion und Aufgaben der Landeszentrale über Jahre ein formelles Regelungsdefizit, das im eklatanten Gegensatz zur realen Situation stand. Diese Lücke war im Landtag bereits mehrfach bemängelt worden. Am 6. November 1996 kam der Parlamentarische Beirat deshalb mit dem Chef der Staatskanzlei und dem Leiter der Landeszentrale überein, am 1. Januar 1997 einen Organisationserlass in Kraft zu setzen, der in den Folgewochen zwischen allen Beteiligten abgestimmt werden sollte. Auch dieser Vorgang erstreckte sich aber über einen weit längeren Zeitraum. Hürden waren im interministeriellen Abstimmungsverfahren zu überwinden. Dabei tauchte die Anregung auf, die Landeszentrale als nachgeordnete Behörde zu verselbständigen. Dieser Vorschlag wurde wegen der damit verbundenen personellen Aufstockungen und entsprechender Auswirkungen auf den Haushalt verworfen. Moniert wurden auch nicht eindeutig geregelte Unterstellungsverhältnisse gegenüber dem Ministerpräsidenten und dem Chef der Staatskanzlei. So sollten noch anderthalb Jahre verstreichen, ehe die Bedenken der Ressorts ausgeräumt waren.

Gemäß dem Organisationserlass vom 4. September 1998 war die Landeszentrale eine Organisationseinheit in der obersten Landesbehörde „Der Ministerpräsident“. Der Leiter bzw. die Leiterin der Landeszentrale „handelt im Rahmen der Weisungen des Ministerpräsidenten und des Chefs der Staatskanzlei selbständig“. Der Organisationserlass benannte als Aufgaben der Landeszentrale – unter dem Vorbehalt der Zuweisung weiterer Aufgaben:

- „- die politische Bildung und die politische Kultur im Land Brandenburg mit dem Ziel zu fördern,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in ihrer Bereitschaft zur Wahrnehmung demokratischer Verantwortung in Staat und Gesellschaft zu unterstützen;
- die Herausbildung eines aktiven Demokratiebewusstseins und das Engagement für europäische und internationale Probleme, die Bewahrung der natürlichen Umwelt und des Friedens zu stärken;
- Maßnahmen der politischen Bildung von Träger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m Land Brandenburg nach der geltenden Richtlinie des Ministerpräsidenten zu fördern.“

## 2.7 Organisatorische Anbindung

Schon im Januar 1991 war die Entscheidung gefallen, dass die Landeszentrale eine Organisationsstruktur der Staatskanzlei war. Die damit verbundene Zuordnung auch zum Ministerpräsidenten entsprach der Praxis in den meisten Bundesländern, weil damit die Garantie des Zugangs zu politischer Bildung als hoheitliche und ressortübergreifende staatliche Aufgabe sichtbar gemacht wurde. Die organisatorische Zuordnung der politischen Bildung zur Staatskanzlei wurde – abgesehen von vereinzelt, nie konsequent betriebenen Vorstößen – nicht angezweifelt. Der Vorschlag der Fraktion Bündnis 90 von Mitte 1993, die Landeszentrale aus der Staatskanzlei auszugliedern, war eine solche Ausnahme.

Mit der organisatorischen Zuordnung übernahm diese für die Landeszentrale deren Verwaltungsaufgaben, insbesondere *Personalangelegenheiten* der Mitarbeiter einschließlich der Einstellung von Praktikanten, der Zuordnung von Auszubildenden und der Mitarbeiterfortbildung, der *Haushaltsangelegenheiten*, und der *allgemeinen Verwaltungsaufgaben*, z. B. Vergabe und Versand von Literatur, Versandaktionen, Bearbeitung von Dienstreisen, Fahrdienst, Materialbeschaffung, Betreuung des Telefon- und Computernetzes, Handwerkerarbeiten, Möblierung.

Mit dem Beginn der 3. Legislaturperiode 1999 wurde die Landeszentrale dem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zugeordnet. Dieser Wechsel war nicht unumstritten. Im Parlamentarischen Beirat argwöhnte man, dass der Einfluss des Parlaments beschnitten werden sollte.

Doch obwohl bis 1999 die augenfällige ressortübergreifende Position politischer Bildung durch den Wechsel zum Bildungsministerium zu entfallen schien, war dieser nicht mit der befürchteten Einschränkung des Stellenwertes politischer Bildung wegen einer möglichen Subsummierung in das schulische Bildungssystem verbunden. Die Angebote der Landeszentrale blieben erhalten.

## 2.8. Der Parlamentarische Beirat

Die Überlegungen der Partnerzentrale in Nordrhein-Westfalen zum Aufbau ein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in Brandenburg vom Januar 1991 enthielten auch die Anregung zur Bildung eines Parlamentarischen Beirats, „um die Überparteilichkeit der Landeszentrale Brandenburg zu unterstreichen und ihre Akzeptanz im Landes zu fördern“. Dieser Vorschlag kennzeichnet in besonderem Maße das Verständnis der Partnerzentrale für die Situation in Brandenburg, denn in Nordrhein-Westfalen gab es kein solches Gremium und gibt es bis heute nicht.

Obwohl zwischen allen Beteiligten – der Staatskanzlei, Koalitions- und Oppositionsparteien und der Landeszentrale selbst – Konsens darüber bestand, einen solchen Beirat bilden zu wollen, erstreckte sich der Gründungsprozess über einen Zeitraum, der den aller anderen ostdeutschen Landeszentrale weit übertraf. Denn im April 1992 gab es in den drei Landeszentralen von Sachsen, Thüringen und Mecklenburg-Vorpommern bereits ein solches Gremium und in Sachsen-Anhalt wurde seine Bildung vorbereitet. Insbesondere die Oppositionsparteien kritisierten diese Verzögerung wiederholt. Zwar hatte bereits eine Kabinetttvorlage der Staatskanzlei vom August 1991 zum Errichtungserlass der Landeszentrale auch die Einsetzung eines Kuratoriums zum Inhalt. Die wiederholte Zurückstellung des Erlasses gab zu Befürchtungen Anlass, durch Verzögerungen könnte nicht nur die Eigenverantwortung der Landeszentrale eingeschränkt werden, sondern auch die

Gewährleistung ihrer Überparteilichkeit durch ein parlamentarisches Gremium. Dennoch sollten mehr als anderthalb Jahre verstreichen und einer Mahnung von Abgeordneten mehrerer Parteien im Oktober 1992 bedürfen, bis die Benennung des Beirats ernsthaft in Angriff genommen, dann aber im Zeitraum April/Mai 1994 zügig zum Abschluss gebracht wurde.

Nachdem das Kabinett am 3. Mai 1994 die Einsetzung eines Parlamentarischen Beirates der Landeszentrale gebilligt hatte, benannte der Hauptausschuss des Landtags nur zwei Tage später dessen Mitglieder Wolfgang Klein (SPD), Martin Habermann (CDU), Prof. Dr. Michael Schumann (PDS-Linke Liste), Renate Schneider (F.D.P.) und Peter Schüler (Bündnis 90).

Am 20. Juni 1994 kam der Beirat zu seiner konstituierenden Sitzung zusammen und gab sich eine Geschäftsordnung. Hauptsächliche Beratungspunkte der ersten Jahre waren immer wieder der noch ausstehende Errichtungserlass bzw. die Vorbereitung eines Organisationserlasses für die Landeszentrale mit den damit verbundenen grundsätzlichen Problemfeldern wie Status, Struktur, Verantwortlichkeiten, die Personal- und Sachmittelausstattung der Landeszentrale, Bewirtschaftungsbefugnis und Förderrichtlinien.

## 2.9. Vier Standorte der Landeszentrale

Der heutige Standort der Landeszentrale auf dem Gelände der Ministerien in der Heinrich-Mann-Allee 107 ist der vierte in ihrer 20jährigen Geschichte. Jeder Umzug war nicht schlechthin eine räumliche Veränderung. Er entsprach den ständig besseren räumlichen Bedingungen in der Landeshauptstadt und zugleich der Komplettierung von Struktur und Personalbestand der Landeszentrale. Vor allem aber wurden mit jedem Ortswechsel günstigere Bedingungen für die Realisierung ihres Programms und ein höheres Maß an Bürgernähe erreicht.

Erste Räumlichkeiten wurden der entstehenden Landeszentrale 1991 im Gebäude der Staatskanzlei zugewiesen. Das nächste Domizil nach diesem Provisorium war eine 1992 bezogene Villa in Neu Fahrland. Sie war leicht renovierungsbedürftig, doch sehr repräsentativ am Ufer des Lehnitzsees gelegen.

1993 wurde wieder umgezogen. Das nächste Domizil befand sich in der Geschwister-Scholl-Straße in Potsdam. Wieder war es ein ehemaliges Wohnhaus. Mit mehreren Etagen bot es zwar mehr Raum für Beratungen und auch zum Empfang von Besuchern, doch nicht für Veranstaltungen oder gar Ausstellungen.

Als Ansprüche von Alteigentümern auf das Haus geltend gemacht wurden, erhielt die Landeszentrale im Sommer 1996 ihr endgültiges und für ihre Ansprüche als „Haus mit offenen Türen“, als Treffpunkt aller an politischen Fragen interessierter Bürgerinnen und Bürger am weitaus besten geeignetes Haus. Hier konnten Bürger Politiknähe finden, aber auch Politiker Bürgernähe. Die offizielle Eröffnung fand am 2. September 1996 statt. Nun konnten an einem Ort Veranstaltungen durchgeführt, Ausstellungen gezeigt und Literatur direkt vergeben werden. Aus dieser Kombination der verschiedenen Bildungsangebote sollte das integrale Konzept der Landeszentrale entstehen. Zu den Vorteilen des neuen Hauses gehörte nicht zuletzt, dass es als ehemaliges Offizierskasino eines der attraktivsten auf dem Gelände der früheren Potsdamer Kadettenanstalt war, das auch einen angemessenen Rahmen für den Besuch ausländischer Gäste bot.

### 3. Inhalte politischer Bildung in Brandenburg

#### 3.1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Die Angebote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verstanden sich als Beiträge und Bausteine einer demokratischen Infrastruktur. Ihre Inhalte leiteten sich in Brandenburg wie in den anderen neuen Ländern von dem Ziel ab, eine pluralistische demokratische Entwicklung zu fördern und mit sachkundigen Informationen den Partizipationswillen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anzuregen und zu stärken. Dies musste geschehen unter den besonderen Bedingungen des Transformationsprozesses unter sichtbarer Abgrenzung vom vormaligen zentralistischen Politikmodell hin zu einer selbstbestimmten, variantenreichen Demokratie. Die Vermittlung dieser Inhalte war zugleich die Voraussetzung, sowohl eine Kultur des demokratischen Engagements aufzubauen als auch staatsbürgerliches Selbstwertgefühl zu untermauern und damit auch politischem Desinteresse und Politikverdrossenheit entgegenzuwirken.

Die inhaltlichen Schwerpunkte politischer Bildung definierten sich in den neuen Ländern auch in ihrer Differenzierung zu grundlegenden gesellschaftlichen Kategorien während der SED-Diktatur. Es galt, jene Grundlagen und Funktionselemente der demokratischen Werteordnung zu vermitteln, die die Menschen hier – weil im Gegensatz zu den überwundenen Herrschaftsmechanismen stehend – in der politischen Praxis entweder gar nicht oder sinnentstellend erfahren hatten. Das war selbst bei dem Begriff „Demokratie“ im Namen des untergegangenen Staates der Fall. Politische Bildung stand deshalb vor der Aufgabe, *Demokratie* und *Rechtsstaatlichkeit* in ihrer originären Bedeutung, in ihrer Komplexität und Vielgestaltigkeit zu vermitteln. Dies galt in erster Linie für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Staat und seinen Bewohnern, das im Katalog der verfassungsmäßigen *Grundrechte* geregelt war. Auch die Verfassungen der DDR hatten Grundrechte enthalten, die aber wegen der fehlend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nicht justiziabel waren. Von der Staatsgründung an waren Grundrechte durch die politischen Verhältnisse, insbesondere durch die faktisch rechtsfreie Tätigkeit des MfS, entwertet wurden, was dazu geführt hatte, dass Verfassungsrechte selbst per Dienstanweisung außer Kraft gesetzt worden waren. Und Ulbrichts Verfassung von 1968 hatte die Grundrechte auch verfassungsrechtlich eingeschränkt, indem sie deren Wahrnehmung an die Grundsätze der Verfassung band, deren Kern die Führungsrolle der SED war. Es galt deshalb deutlich zu machen, dass das demokratische Staatswesen sich sowohl auf die Legitimation durch das Volk stützen musste als auch an eine stabile Rechtsordnung gebunden war und dass Rechtsstaatlichkeit auch eine konfliktorientierte politische Kultur umfasste.

Ein hoher Stellenwert kam im Aufgabenspektrum politischer Bildung der Vermittlung der Regeln der *Gewaltenteilung* zu, die der Marxismus-Leninismus als Verschleierung der Herrschaft des Kapitals verworfen hatte. Da die Parteiherrschaft eo ipso legitimiert war, bedurfte es keiner Gewaltenhemmung. Es galt nun nicht nur die Notwendigkeit der drei Elemente der Gewaltenteilung in der politischen Bildung zu vermitteln, sondern auch deutlich zu machen, dass die Legitimation der gesetzgebenden Gewalt ein geregeltes Wahlrecht voraussetzt, dass zu einer funktionierenden Parlamentsherrschaft eine mit kraftvollen Kompetenzen ausgestattete Opposition gehört, dass die Exekutive dem Prinzip der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unterworfen ist, dass die Judikative unabhängig handelt und schließlich dass der öffentlichen Meinung eine Wächterfunktion als „vierte Gewalt“ zukommt, weil Demokratie und Rechtsstaatlichkeit immer wieder der Gefahr von Blockade oder Einschränkung ausgesetzt sind.

Von großer Bedeutung gerade in den neuen Ländern war der *Föderalismus* als „vertikale Gewaltenteilung“. Das Land Brandenburg war 1952 – wie auch die anderen Länder der DDR – der Zentralisierung geopfert, es war aufgelöst und durch Bezirke ersetzt worden. In der Folgezeit waren auch sämtliche Rudimente kommunaler Selbstverwaltung liquidiert worden. Politischer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oblag deshalb in besonderem Maße die Vermittlung des föderalen Staatsaufbaus, seiner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und auch der Inhalt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Zur Wiedererweckung des Föderalismusgedankens gehörte auch *Landesgeschichte und -kunde*. Mit der Zerschlagung der Länder war auch ihre Geschichte marginalisiert worden und hatte erst in den letzten Jahren der DDR wieder mehr Augenmerk erfahren. Die Befriedigung des für landesgeschichtliche Themen bestehenden erheblichen Informationsbedarfs kam nicht zuletzt der Aufgabe der politischen Bildung entgegen, zur Herstellung und Vertiefung von Landesidentität beizutragen.

Ein ähnlich hoher Stellenwert wie der Landesgeschichte kam im Aufgabenspektrum politischer Bildung Problemen der deutschen und auch der europäischen *Geschichte* zu. Hatte die Propaganda der DDR doch die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weitgehend aus der deutschen Geschichte ausgeblendet und diese wie auch die Geschichte anderer Länder in erster Linie als Abläufe von Revolutionen dargestellt. Ausgewogene Geschichtsbilder fehlten. Das galt ausdrücklich auch für die ehemaligen „Bruderländer“ und besonders für die Sowjetunion, aus deren Geschichte zahllose historische Fakten verschwiegen oder verfälscht worden waren.

Im Rahmen der Vermittlung eines ausgewogenen Geschichtsbildes kam der *Geschichte der DDR* ein herausgehobener Rang zu. Einerseits musste deutlich werden, dass die Geschichte der DDR Teil der deutschen Nationalgeschichte war und diese wiederum während der Zeit der Teilung eine deutsch-deutsche Beziehungsgeschichte, die aus den Spezifika der Nachkriegszeit resultierte. Die Einfügung der beiden Landesteile in gegensätzliche Machtblöcke hatte besonders für die Menschen im Osten einen dauerhaften Erfahrungsdualismus zur Folge gehabt. Einerseits hatten sie unter den schwierigen Bedingungen der Einbindung in das sowjetische Machtgefüge ein gewaltiges Aufbauwerk vollbracht. Andererseits bestimmten Repression und Bevormundung sowie Mangelwirtschaft permanent das Alltagsleben. Die untrennbare Beziehung dieser Elemente in der Biografie der hier in den Jahren 1945 bis 1989 Lebenden musste und wollte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berücksichtigen.

Weitere Herausforderungen, die in der Vergangenheit ebenfalls Fehldeutung und Missbrauch erfahren hatten und vor denen die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stand, waren die Förderung des *Europagedankens*, in Brandenburg insbesondere in Bezug auf das deutsch-polnische Verhältnis, die Herausforderungen einer sich schnell *verändernden Welt*, *Israel* und das deutsch-israelische Verhältnis.

In dem Maße, in dem demokratiefeindliche, insbesondere rechtsextremistische Einstellungen Gewicht in den neuen Ländern erlangten, gewann auch die Auseinandersetzung mit *Rechtsextremismus*, mit *Rassismus* und *politischer Gewalt*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an inhaltlicher Bedeutung.

Und nicht zuletzt musste politische Bildung kontinuierlich auf *aktuelle* Entwicklungen und Fragestellungen reagieren.

### 3.2 Spezifische Inhalte politischer Bildung in Brandenburg

Neben den inhaltlichen Schwerpunkten politischer Bildung im Allgemeinen und in den neuen Ländern im Besonderen hatte sich die Landeszentrale drei inhaltlichen Schwerpunkten zu stellen, die für die Geschichte und Gegenwart Brandenburgs von Bedeutung waren, in politischen Debatten engagiert debattiert wurden und Auswirkungen auf die Demokratieentwicklung und die politische Kultur unseres Landes haben:

- erstens der Stellenwert Preußens,
- zweitens die besondere Bedeutung der Beziehungen zu Polen auch im Hinblick auf die deutsche Nation und den Prozess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und
- drittens die sorbische Minderheit in der Lausitz.

Hilfreich war dabei, dass in Potsdam wissenschaftliche Einrichtungen bestanden bzw. im Aufbau begriffen waren, die ihren Sachverstand einbrachten: die Universität, das Haus der Brandenburgisch-Preußischen Geschichte, das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und das Potsdam-Museum, die aufgeschlossen für Kooperationen waren. Das erlaubte auch die Hinwendung auf spezielle thematische Schwerpunkte. So förderte die Landeszentrale 1993 die Veranstaltung „Preußen und seine Frauen“ der Volkshochschule und der Universität und war an der Durchführung beteiligt. Ein Jahr später war „Brandenburg – Preußens Erbe?“ Gegenstand einer großen Konferenz der Landeszentrale. Eingebettet in die Frage nach den Dimensionen des preußischen Erbes behandelte sie den Umgang mit dem preußischen Staatseigentum beim deutschen Einigungsprozess. Eine mehrteilige und vielthematische Veranstaltungsreihe war 2001 dem 200. Jahrestag des Königreichs Preußens gewidmet.

Bestellungen ~~nach~~ von landeskundlicher Literatur über Preußen gehörten zu den häufig – auch aus anderen Bundesländern und dem Ausland - angeforderten Publikationen. Schließlich wurden Mitarbeiter der Landeszentrale zu Vorträgen zum Thema Preußen eingeladen, z. B. an die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ie zweite inhaltliche Spezifik politischer Bildung in Brandenburg ist der besondere *Stellenwert Polens*. Der Organisationserlass verpflichtet die Landeszentrale, das Engagement für europäische Probleme zu stärken. Das Verhältnis Brandenburgs zu Polen mit der über 250 Kilometer langen gemeinsamen Grenze hat dabei einen hohen Stellenwert. Intensiv und auch Konflikt beladen sind die Beziehungen zwischen Brandenburg und seinem östlichen Nachbarn. Das Herzogtum Preußen, das dem Königreich seinem Namen gab, stand lange unter polnischer Lehnshoheit. Im Königreich Preußen sprach 1900 jeder zehnte Einwohner polnisch. Zu DDR-Zeiten kamen polnische Arbeiter in Brandenburger Fabriken über die Grenze. Und in den 1990er-Jahren verfolgten die Brandenburger die Demokratiebewegung in Polen mit Sympathie. Heute bildet die brandenburgisch-polnische Grenze eine wichtige Brücke zu Osteuropa und ein Bindeglied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Auch Widersprüche werden dabei nicht ausgespart. Von Bedeutung ist auch die Erkenntnis, dass Osteuropa die politische Kultur Deutschlands mitprägte. Brandenburg empfing mehr als viele andere Territorien Deutschlands von seinen östlichen Nachbarn politische und kulturelle Impulse, deren sich viele heute nicht bewusst sind. Sie sind jedoch ein wichtiges Argument gegen nationale Überheblichkeit und Rechtsextremismus. All diese und viele andere Aspekte prägen deshalb auch die Inhalte politischer Bildung Brandenburgs und bilden einen dauerhaften Bestandteil des Angebotes der Landeszentrale. Ferner fördert sie eine große Anzahl von Projekten, die der Aufarbeitung des deutsch-polnischen Verhältnisses und der Gestaltung der grenzüberschreitenden Beziehungen zuwenden. Bei solchen oft binationalen Veranstaltungen führte das Zusammenwirken von Polen und Deutschen zu interessanten Ergebnissen und neuen Erkenntnissen. Exemplarisch dafür stehen die Seminare des Landfrauenbundes im

Oderbruch mit jährlich wechselnden thematischen Schwerpunkten oder die sich bis in den Raum Litauen erstreckenden länderübergreifenden Veranstaltungen der Landsmannschaft Ostpreußen. Schließlich wurden in den 1990er Jahren landeskundliche Seminare für polnische Deutschlehrerinnen und -lehrer durchgeführt. Die dabei vermittelten Informationen waren für die polnischen Lehrer von Bedeutung, weil in Polen Material dazu fehlte. Als man die Lücke geschlossen hatte, waren diese Seminare entbehrlich.

Schließlich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in Brandenburg und in Sachsen die slawischen *Sorben/Wenden* leben, die größte autochthone Minderheit Deutschlands. Vor allem die Lausitz ist von sorbischer Kultur in hohem Maße geprägt.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st dies unter verschiedenen Aspekten bedeutsam. Sich dieser Problematik anzunehmen, gehört zu ihrem Auftrag, der darin besteht Landeskunde und Landesgeschichte zu vermitteln. Vor allem im Westen Deutschlands war die Existenz der Sorben weitgehend unbekannt. Nicht wenige Verwaltungshelfer aus Nordrhein-Westfalen waren anfänglich verblüfft, in ihrem Partnerland auf zweisprachige Ortsschilder zu stoßen. Über bloße Informationsvermittlung hinaus ist der Umgang mit Minderheiten ein Indiz für den Stand der Demokratieentwicklung eines Landes. Der Schutz und die Erhaltung der sorbischen Identität ist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Rechtsordnung und der politischen Kultur Brandenburgs, die zu vermitteln ebenfalls zu den Aufgaben politischer Bildung gehört. Dieser Aspekt hat umso mehr Gewicht, als auf Bundesebene die verfassungsmäßige Festschreibung der Rechte der sorbischen Minderheit bislang unterblieb. Zugleich gilt es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Rechtsextremismus – einer an Bedeutung zunehmenden Aufgabe politischer Bildung – bewusst zu machen, dass die vielfältigen kulturellen Impulse, die das deutsche Volk auch von seinen Minderheiten empfing,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Nation mitformte. Die Landeszentrale hat diese spezifische Verpflichtung politischer Bildung in Brandenburg in einer Reihe von Maßnahmen umgesetzt. Ein Beispiel dafür war das Kolloquium „Die Sorben/Wenden in Deutschland und Nationale Minderheiten in Europa“ im September 2000 in Cottbus. Und schließlich fördert die Landeszentrale spezielle Projekte im sorbisch/wendischen Siedlungsraum. Exemplarisch dafür stand eine Ausstellung in Lübbenau über den wirtschaftlichen Wandel im Braunkohlegebiet und dessen soziale Auswirkungen, die auch überregional großes Interesse fand.

### 3.3 Förderung von bürgerschaftlichem Engagement

Eine zentrale Aufgabe politischer Bildung ist es,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bei der aktiven Wahrnehmung von Verantwortung in Staat und Gesellschaft und der Ausübung demokratischer Rechte zu unterstützen. Dies setzt die Kenntnis der entsprechenden Regeln voraus. Rechtsstaatliche Strukturen und Abläufe gehören deshalb zu den inhaltlichen Schwerpunkten nicht nur im Publikationsangebot der Landeszentrale, sondern auch der geförderten Maßnahmen. Sie erfreuen sich deshalb konstanter Nachfrage.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vollzieht sich vor allem auf kommunaler Ebene. Einwohner und Bürger arbeiten „vor Ort“ für die Durchsetzung ihrer Interessen erforderlichenfalls auch gegen kommunale Vertretungen und Verwaltungen, wie die ca. 180 Bürgerbegehren im Zeitraum 1990 bis 2005 belegen, die in 58 Fällen zu Bürgerbegehren führten, darunter 1998 die Abwahl des Oberbürgermeisters der Landeshauptstadt. Für die Wahrnehmung kommunaler Rechte waren die von der Landeszentrale angebotenen Publikationen, insbesondere der Kommentar zur Kommunalverfassung „Bürgerinnen und Bürger entscheiden mit“, zweifellos hilfreich.

Die Wahrnehmung bürgerschaftlichem Engagements stand auf der Tagesordnung etlicher Konferenzen, z. B. der Seniorenkonferenzen, deren Mitveranstalter die Landeszentrale war,



besonders im Internationalen Jahr der Senioren. Darüber hinaus nahmen auch freie Träger die Gelegenheit wahr, sich über die Materie auf Konferenzen der Landeszentrale auszutauschen.

Beispielhaft für den Umgang der Landeszentrale mit einer Aktion bürgerschaftlichem Engagements war eine Broschüre der Bürgerbewegung „Freie Heide“, die sich gegen die weitere Benutzung des „Bombodroms“ durch die Bundeswehr nach dem Abzug der Sowjetarmee wehrte. Die „Freie Heide“ erregte bundesweit Aufsehen, nicht zuletzt weil sie mit ihrem länderübergreifenden Wirken, der Dauer, der Zielstrebigkeit, der Intensität ihrer Aktionen und der Vielzahl der beteiligten Menschen Vorbild für ähnliche Willensbekundungen sein konnte.

### 3.4 Senioren als Rezipienten und Akteure politischer Bildung

Ein Fünftel der Brandenburger ist älter als 65 Jahre. Dieser Anteil steigt weiter. Di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die freien Träger haben die demografische Entwicklung in ihrer Programmgestaltung von Anfang an berücksichtigt. Senioren gehören zu den treuen Besuchern der Veranstaltungen der Landeszentrale. Auch bei der Teilnehmerstruktur von Veranstaltungen der freien Träger ist der Anteil der Älteren konstant. Insbesondere Problemen der regionalen Geschichte und Entwicklung gilt ihr Interesse. Manche Träger hätten ohne die aktive Beteiligung von Senioren erheblich an Substanz eingebüßt. Andere hatten zwar Seniorenarbeit nicht in den Mittelpunkt ihrer Programmatik gestellt, boten aber regelmäßig Maßnahmen für Senioren an. Wieder andere – z. B. BBZ Bernau - führten mit großer Resonanz Geschichtswerkstätten und ähnliche Veranstaltungen durch, deren methodischer Ansatz auf ein enges Zusammenwirken von Alten und Jungen abzielte.

Wurde bei den Veranstaltungen bereits sichtbar, dass Senioren nicht nur Nutznießer waren, sondern der politischen Bildung vielfältig nutzbare geistige Ressourcen boten, wurde dies besonders bei deren Wirken als Autoren deutlich. Durch die gesellschaftlichen Umbrüche der frühen 1990er Jahre wurde viel intellektuelle Kraft früh verrenteter Wissenschaftler freigesetzt, die in hoch qualifizierten Manuskripten ihren Niederschlag fand. Aus jener Zeit stammte eine Vielzahl von wertvollen und bei Interessenten und Multiplikatoren politischer Bildung hochgeschätzten 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aus der Feder dieser Autoren. Als Beispiele seien genannt: die Briefdokumentation „Was bleibt ist Hoffnung“, oder etliche Hefte aus den Reihen „Brandenburgischen historischen Hefte“ und „Internationale Probleme und Perspektiven“. Etliche Träger gaben Zeitzugbroschüren heraus. Die besten von ihnen wurden von der Landeszentrale gefördert und in deren Publikationsangebot aufgenommen. Besonders beeindruckte das Buch „Allenfalls kommt man für ein halbes Jahr in ein Umschulungslager“. Es beschrieb Schicksale von Jugendlichen aus Wittenberge, die in der Nachkriegszeit vom sowjetischen Geheimdienst willkürlich verhaftet und interniert wurden; einige von ihnen wurden hingerichtet. Natürlich ist auch der Anteil der Senioren unter den Nutzern des Publikationsangebots der Landeszentrale hoch. Etwa jeder zehnte ist über 60 Jahre alt.

Die Verantwortung der Landeszentrale für seniorenpolitische Probleme unter dem Aspekt der politischen Bildung fand auch in der Teilnahme an bedeutsamen seniorenpolitischen Veranstaltungen ihren Ausdruck. Drei davon fanden im Internationalen Jahr der Senioren 1999 statt. Im März fand war die deutsch-polnische Seniorenkonferenz dem Thema „Europa für Senioren – Senioren für Europa“ gewidmet. Die Veranstaltung „Seniorenbildung: Erwartungen, Anforderungen, Möglichkeiten“ der Reihe „Treffpunkt Landtag“ im April 1999 beriet über Seniorenbildung unter verschiedenen Blickwinkeln. Ein Programmschwerpunkt

lautete „Seniorenbildung und politische Bildung“. Im November 1999 führten der Seniorenrat des Landes Brandenburg und die Landeszentrale gemeinsam die Erste Landesseniorenkonferenz durch, die sich mit bürgerschaftlichem Engagement und mit Formen des Ehrenamtes auseinandersetzte. Die Beiträge beider Veranstaltungen wurden in Broschüren dokumentiert.

### 3.5 Interesse an Brandenburg außerhalb Deutschlands

Wenngleich der gesetzliche Auftrag der Landeszentrale auf politische Bildung in und für Brandenburg gerichtet ist, treffen immer wieder Bitten ein, ihre Ressourcen in Einzelfällen auch Institutionen oder Interessenten aus dem Ausland teilhaben zu lassen.

Vor allem in den ersten Jahren nach der 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war das Interesse ausgeprägt, Bildungslücken über die neuen Länder zu schließen. Deshalb fragten in jener Zeit Interessenten aus den alten Ländern und auch aus dem Ausland besonders oft nach landeskundlicher Literatur über Brandenburg. In den 1990er Jahren gab es viele Anfragen aus Polen. Sogar Klassensätze wurden erbeten. Auch in andere Länder wurden Bücher versandt, vor allem in Deutschlands Nachbarländer. Auffällig war zeitweilig eine Vielzahl von Bestellungen aus Dänemark, wo die neuen Länder Thema von Schulprojekten waren. Selbst nach Übersee gingen landeskundliche Publikationen. In Regalen in Kanada, den USA, Argentinien oder Australien stehen Bücher der Landeszentrale.

Um den Stellenwert politischer Bildung nach dem Vollzug der Einheit Deutschlands authentisch kennen zu lernen, baten Gruppen von Politikern oder Wissenschaftlern um Vorträge oder Diskussionsrunden mit Mitarbeitern der Landeszentrale. Dazu gehörten auch hochrangige Delegationen wie 1997 eine Gruppe von Experten der russischen Regierung oder 1999 Senatoren und Abgeordnete aus Thailand. Zu Vorträgen über die politische Bildung in Brandenburg wurden Mitarbeiter der Landeszentrale auch in andere Länder eingeladen, z. B. 1996 ins belarussische Minsk oder 1997 nach Sibiu in Rumänien.

Besondere Bedeutung unter den internationalen Aktivitäten der Landeszentrale hatte der Meinungsaustausch zwischen Mitarbeitern der Landeszentrale und Delegationen aus der Republik Korea zu Erfahrungen über die Rolle der politischen Bildung im Prozess der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er Süden erhoffte von der Überwindung der deutschen Teilung Impulse für eine mögliche Vereinigung mit dem Norden des geteilten Landes. Seit 1996 wurden in Potsdam etwa im Jahresturnus koreanische Delegationen empfangen. Das erhebliche Interesse der koreanischen Seite gipfelte in einer Einladung der Leiterin der Landeszentrale nach Seoul.

## 4. Förderung freier Träger

### 4.1 Politische Bildung im Flächenland Brandenburg

Unter den neuen Ländern hat Brandenburg die größte Fläche. Mit fast 300 000 km<sup>2</sup> ist es unter allen Bundesländern das fünfgrößte. Im Gegensatz zu dieser territorialen Ausdehnung steht seine sehr geringe Bevölkerungsdichte. Unter allen deutschen Ländern rangiert es vor Mecklenburg-Vorpommern an vorletzter Stelle. Der größte Teil der Brandenburger ist im ländlichen Raum ansässig. Kleine und kleinste Orte überwiegen. Von den fast 1 800 Gemeinden, die es 1990 gab, hatten nahezu zwei Drittel weniger als 500 Einwohner. Unter diesen geografischen und strukturellen Bedingungen war es der Brandenburger noch weniger als anderen Landeszentralen möglich, ein eigenes flächendeckendes Veranstaltungsangebot zu

unterbreiten. Freie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bieten im großen Flächenland durch lokale und regionale Sachprogramme vielfältige und unabdingbare Möglichkeiten an Informationen und Willensbildung. Als Orte politischer Kommunikation und demokratischer Meinungsbildung sind sie unverzichtbar. Eine breit gefächerte Infrastruktur freier, pluralistisch agierender, auf das Engagement der Menschen gestützter Bildungsträger herauszubilden und zu erhalten und die von ihnen angebotenen Bildungsprojekte zu fördern, hatte und hat deshalb für die politische Bildung Brandenburgs als Investition in die Zukunft einen sehr hohen Stellenwert.

#### 4.2 Trägerstrukturen und Inhalte geförderter Projekte

Innerhalb kurzer Zeit baute die Landeszentrale ein differenziertes und pluralistisches landesweites Netzwerk von über 100 freien Trägern auf, das das besondere Profil der politischen Bildung in Brandenburg prägte. Sie förderte ihren Bestand und ihre Tätigkeit finanziell und bei der Planung ihrer Maßnahmen, Antragstellung und Abrechnung. Zuschüsse zur Absicherung ihrer Arbeitsfähigkeit der Träger sicherten einen permanenten Bestand politischer Erwachsenenbildung.

Die Trägerlandschaft in Brandenburg formierte sich einerseits aus Neugründungen von Bildungsträgern, die sich an westdeutsche Erfahrungen anlehnten und durch Ost-West-Kooperationen zu einem professionellen Profil fanden. Andererseits wurden mitgliederstarke ostdeutsche Bildungsstrukturen der Erwachsenenbildung in die freie Trägerlandschaft transformiert. Ferner entwickelten engagierte Anhänger der Bürgerbewegungen in neu gebildeten Bildungsträgern Interesse für ihre Themen. Bedeutung erlangten schließlich auch solche Vorhaben, die internationale Beziehungen in den Mittelpunkt ihrer Aktivitäten stellten. In diesem strukturellen und inhaltlichen Rahmen prägten fünf große Gruppen von Trägern die politische Bildungslandschaft Brandenburgs.

Erstens waren dies *Bildungswerke im Umfeld von Parteien, Gewerkschaften und europäischen Initiativen* wie die den Parteien nahe stehenden Stiftungen, das DGB-Bildungswerk, die Europäische Staatsbürgerakademie oder das Europahaus Brandenburg mit inhaltlich übergreifenden Bildungsangeboten. Gesetzlich garantierte Zuschüsse erhielten die den Parteien nahe stehenden Stiftungen. Der jeweilige Förderumfang war von der Fraktionsstärke im Landtag abhängig. Im ersten Brandenburger Landtag waren fünf Parteien vertreten. Entsprechend erhielten Zuschüsse die der SPD nahe stehende Friedrich-Ebert-Stiftung, die Jakob-Kaiser-Stiftung (CDU), an deren Stelle ab 1995 die Konrad-Adenauer-Stiftung, die Rosa-Luxemburg-Stiftung (PDS/Linke), die Karl-Hamann-Stiftung (FDP) und die Grundtvig-Stiftung (Bündnis 90). Ab 1994 erhielten nach einem adäquaten Schlüssel auch die den Parteien nahe stehenden kommunalpolitischen Vereinigungen bzw. Stiftungen zur Herausbildung und Weiterbildung von Bürgern für die Tätigkeit i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Zuwendungen: die Sozialdemokratische Gemeinschaft für Kommunalpolitik, die Märkische Kommunalhilfe (CDU), das Kommunalpolitische Forum Land Brandenburg (Linke), die Karl-Hamann-Stiftung und die Grün-bürgerbewegte Kommunalpolitik Land Brandenburg.

Zweitens erhielten sich *Einrichtungen der Erwachsenenbildung mit ostdeutschen Traditionen*. Bei ihnen waren Themen politischer Bildung nur ein Teil eines breiten Bildungsspektrums. Ein Beispiel der erfolgreichen Transformation traditioneller ostdeutscher Bildungsstrukturen in die freie Trägerlandschaft war das 1991 gegründete Landesbildungswerk des Brandenburgischen Kulturbundes. Es nutzte die erhaltene dezentrale Gliederung des Kulturbundes der DDR und konnte so ein vielfältiges Bildungsangebot über weite Landesteile

präsentieren. Das URANIA-Bildungswerk „Bertha von Suttner“, ein weiteres Beispiel aus dieser Trägergruppe, setzte sich u. a. mit Brandenburger Landesgeschichte auseinander.

Drittens entstanden *Trägervereine* in sozialen, kulturellen oder interkulturellen Bereichen *mit spezifischer*, oft an der Klientel orientierter *inhaltlicher Ausrichtung*, z. B. die Akademie 2. Lebenshälfte, das Forum Ost-West Potsdam, die RAA Brandenburg (Regionale Arbeitsstellen für Bildung, Integration und Demokratie), die Deutsche Gesellschaft u. a. Exemplarisch für diese Gruppe von Trägern auch unter den spezifischen Anforderungen Brandenburgs stand auch die 1991 gegründete Deutsch-polnische Gesellschaft Brandenburg. Ihre Tätigkeit richtete sich insbesondere an Kommunalpolitiker, Verbände, Vereine und Initiativen im grenznahen Raum. Sie wollte dazu beitragen, gegenseitige Vorurteile abzubauen und eine politische Kultur der Verständigung und Kooperation zwischen Polen und Deutschland zu entwickeln.

Viertens bildeten sich *lokale Bildungsvereine* wie BBZ (Bildung-Begegnung-Zeitgeschehen) Bernau oder die Eggersdorfer Seminare, deren Themen vorrangig auf die Geschichte und aktuelle Situation ihrer Region ausgerichtet waren. Der 1991 gegründete Verein Eggersdorfer Seminare gehörte zu den Spezifika der Brandenburger Bildungslandschaft. Er war die einzige Neugründung eines politischen Bildungsträgers in einer Region, in der – weil hier das Verteidigungsministerium der DDR seinen Sitz hatte – viele ehemalige Angehörige der NVA wohnten. Sie waren eine vorrangige Zielgruppe dieses Bildungswerks.

Und fünftens gründeten sich *Vereine mit eigenen Arbeits- und Begegnungsräumen sowie Übernachtungsmöglichkeiten*. Mit einer guten Küche waren sie für Mehrtagesveranstaltungen geeignet und trugen individuellen Ansprüchen von Tagungsteilnehmern Rechnung. Dazu gehörte z. B. das 1991 gegründete Bildungs- und Kulturhaus „Villa Fohrde“ mit mehrtägigen Veranstaltungen für Frauen und Mädchen, Antirassismus-Seminaren, Ost-West-Begegnungen oder politisch-ökologischen Veranstaltungen.

Als Brandenburgs eigene Trägerlandschaft erst im Entstehen begriffen war, wurden auch *Träger aus dem Partnerland Nordrhein-Westfalen* gefördert, die ihre Aktivitäten auf Brandenburg ausdehnten. Beispiele dafür sind das Humanistische Union Bildungswerk Nordrhein-Westfalen oder das deutschland- und europapolitische Bildungswerk Tecklenburg.

Doch schon 1993 war eine Vielzahl von Brandenburger Trägern entstanden. In diesem Jahr wurden über 900 Förderanträge gestellt. Davon erhielten 104 Träger Mittel zur Förderung von Projekten.

Große Träger erhielten auf der Grundlage eines *Jahresprogramms* Zuwendungen in einem beträchtlichen Volumen. Dieses umfasste in der Anfangsphase neben der Projektförderung auch eine *Anschubfinanzierung*. Im Jahr 1993 waren dies 19 Zuwendungsempfänger.

Exemplarisch dafür stehen die folgenden Träger.

- das gemeinsame Bildungswerk des Landeshochschulverbandes und des DGB „Arbeit und Leben“ mit einer arbeitnehmerorientierten Bildungsarbeit, die über die Zusammenhänge von Arbeitswelt und Politik orientierte, ebenso das DGB-Bildungswerk „Wilhelm Leuschner“;
- das Landesbildungswerk Brandenburg der Arbeiterwohlfahrt mit Anti-Rassismus-Seminaren;
- die Berlin-Brandenburgische Auslandsgesellschaft, die mit ihrer Bildungsarbeit u. a. Deutschstämmige oder jüdische Kontingentflüchtlinge aus der ehemaligen UdSSR mit dem politis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vertraut machte;

- der Bernauer Verein BBZ, der sich u. a. der biografischen Aufarbeitung der DDR-Geschichte und der Frauenbildungsarbeit zuwandte;
  - das Bildungswerk Brandenburg der Deutschen Gesellschaft mit einem inhaltlich sehr breit gefächerten Programm;
  - das Brandenburger Bildungswerk „Pro Europa“ mit einem internationalen Programm, das vorwiegend auf Osteuropa ausgerichtet war.
- Die Höchstsumme, die auf der Grundlage eines Jahresprogramms bewilligt wurde, betrug 1993 60 000 DM. Sie ging an neun Träger.

Darüber hinaus wurden Einzelprojekte in großer Zahl gefördert. Ein Teil der Träger, die sie realisierte, stellte im Jahresturnus Anträge, andere nur gelegentlich. Gemeinsam war ihnen allen eine politische Bildungsarbeit auf hohem Niveau, die durch interessante Vorhaben Aufmerksamkeit in der Region fanden. Dafür stehen beispielhaft

- die Fördergemeinschaft Lindenstraße auf dem Gelände des früheren Stasigefängnisses in Potsdam;
- der Bürgerbund Nordheim mit Projekten zur Geschichte des Raumes Strausberg;
- die Deutsch-Französische Gesellschaft mit Antikriegsprojekten auf der Grundlage von Erfahrungen aus dem Ersten Weltkrieg;
- die Domowina als Interessenvertretung der Sorben;
- das Deutsch-Polnische Literaturbüro;
- die Frauenbildungsstätte Franzenhof;
- der Förderverein Akademie 2. Lebenshälfte mit Angeboten für die ältere Generation.

Die höchste Fördersumme erhielt 1993 mit 166 000 DM das Märkische Arbeitnehmer Bildungs- und Beratungswerk. Doch auch mit kleineren Beträgen wurden interessante und bedeutsame Einzelprojekte bedacht. So gingen 660 DM an die Kreisvolkshochschule Prenzlau oder 720 DM an den Historischen Verein Frankfurt/Oder.

Seit 1995 wurden Fördermittel für die außerschulische Jugendbildung an regional tätige freie Träger über die örtlichen Jugendämter ausgereicht. Im Unterschied zur sonstigen Haushaltsentwicklung wurden in den 1990er Jahren diese Mittel sogar aufgestockt: von 121 000 DM 1995 auf 184 000 DM 1997.

Anfänglich überwogen Träger aus der Potsdam und dem Umland, doch trat an die Stelle dieser Dominanz der Landeshauptstadt allmählich regionale Symmetrie. Etliche Vereine hatten sich früh in Frankfurt/Oder und in den östlichen Regionen gebildet, desgleichen im Norden Brandenburgs, z. B. die Europa-Union Uckermark. In der Lausitz vollzog sich dieser Prozess erst in den Folgejahren.

Die politischen Bildungsveranstaltungen wiesen eine große inhaltliche Vielfalt auf. Anfangs überwogen geschichtliche Themen. So beschäftigte sich 1993 fast ein Viertel der Projekte mit Problemen der jüngsten Geschichte, insbesondere der Aufarbeitung von DDR-Geschichte. Relativ viele Veranstaltungen befassten sich auch mit Themen aus den Bereichen Jugendpolitik, Außenpolitik, Bildung und Wissenschaft, Sozialpolitik. Die Themen Ausländerpolitik, Frauenpolitik, politisches System, Wirtschaft und Rechtsstaat gewannen erst später an Gewicht. Und noch weniger angeboten wurden anfänglich die Themenkomplexe Kommunalpolitik, Gewaltprävention, Arbeitsmarktpolitik. 1996 waren die Debatten um den Volksentscheid über ein gemeinsames Bundesland Berlin-Brandenburg ein thematischer Schwerpunkt der geförderten Maßnahmen. Besonders im Berlin nahen Raum setzten sich Träger mit Problemen des regionalen Zusammenwachsens auseinander und mit den Auswirkungen einer möglichen „Länderehe“ für die Kommunen und für die Menschen.

Einige Beispiele veranschaulichen die inhaltliche Vielfalt der geförderten Projekte und die Suche der Träger nach adäquaten und interessanten Bildungsformen. Die Theatertournee „Beschädigte Seelen“ über Aktivitäten des DDR-Staatssicherheitsdienstes gegenüber Kindern und Jugendlichen war von Diskussionsabenden begleitet, in denen auch Betroffene auftraten. Das Filmprojekt „Zehdenick - Schöne Stadt mit Nazis?“ zeigt die Folgen eines Anschlags auf einen jüdischen Friedhof und fragt, inwieweit hinter einer schönen Fassade Kommunalpolitiker und Bürger Antisemitismus und rechtsextremes Gedankengut dulden. Ein anderes Projekt organisiert in einer „Foto-Werkstatt generationenübergreifende Begegnungen. In der Veranstaltung „Auf dem Weg nach Europa“ simulierten jüngere Teilnehmer Abgeordnet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machten sich auf diese Weise mit Aufgaben und Zielen der EU vertraut. „Grenzstädte – Grenzregionen“ organisierten deutsch-polnische Begegnungen von Senioren aus Orten beiderseits von Oder und Neiße. Das Geschichtsforum „10 Jahre Neuhardenberg“ – der Ort war in der DDR in „Marxwalde“ umbenannt worden – war u. a. mit einer Publikation, Ortsführungen und einem Post-Sonderstempel verbunden.

Die thematische und methodische Vielgestaltigkeit spiegelt auch die differenzierte Interessenlage der Veranstaltungsteilnehmer wider und deren berufliche Herkunft. Unter den Teilnehmern dominierten Studenten und Auszubildende, gefolgt von Lehrern und Wissenschaftlern bzw. Senioren aus diesen Berufsgruppen. Theologen, Juristen, Künstler oder Soldaten besuchten nur in Ausnahmefällen die Veranstaltungen der freien Träger. Ausländer waren in der Regel nur bei den Projekten zu Gast, die gezielt auf deren Interessenlagen eingingen. Bedauerlicherweise erschienen auch Politiker kaum, es sei denn, sie wurden als Referenten gezielt eingeladen.

Relativ ausgeglichen war die Altersstruktur der Besucher. Erfreulicherweise waren viele Jugendliche – sogar solche, die das 16.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tten – Gäste der geförderten Veranstaltungen. Etwas größer war das Interesse unter den weiblichen Besuchern, vor allem bei den jüngeren Altersgruppen. Nur bei den 40- bis 60jährigen überwogen Männer. In den ersten Jahren dominierten bei den Veranstaltungsformen Seminare mit 80 %.

#### 4.3 Förderrichtlinien

Rechtsgrundlage für die Förderung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freier Träger sind die Förderrichtlinien, deren Ziel es ist, ein überparteiliches und politisch ausgewogenes Bildungsangebot aufrechtzuerhalten, das hohen qualitativen Maßstäben entspricht und alle Regionen des Landes erreicht. Die Richtlinien definieren inhaltliche und didaktische Grundsätze, die für eine Förderung maßgeblich sind: die Vermittlung von Informationen zu aktuellen und historischen Fragen, zum Abbau von Vorurteilen gegenüber Minderheiten und zu internationalen Fragen, die zur Teilnahme am politischen Diskurs befähigen und die in den Regionen des Landes angeboten werden. Während diese inhaltlichen Grundsätze unumstritten sind, wurden auf der Suche nach deren effektivster Regelung allein bis 1998 vier Förderrichtlinien erlassen. Die erste datiert vom 30. Juni 1992. Nach deren Überarbeitung trat eine neue am 10. März 1996 in Kraft. Auf deren Grundlage konnte die Landeszentrale erfolgreich arbeiten, weil sie eine Reihe von Verbesserungen enthielt. Von Bedeutung war insbesondere die Gewährung einer Verwaltungskostenpauschale. Weiter gab es u. a. Pauschalen für Unterkunft und Verpflegung, eine projektbezogene anteilige Finanzierung des Aufwandes für Vorbereitung, Koordinierung und Nachbereitung von Projekten. Die Antragsteller hatten einen angemessenen Eigenanteil zu gewährleisten. Gut etablierte Träger erhielten Zuwendungen auf der Grundlage eines Jahresprogramms. Die Förderung auswärtiger Bildungsträger war nunmehr ausgeschlossen.

Dennoch gab es im Umgang mit der neuen Richtlinie einige Probleme, so dass der Hauptausschuss des Landtags bereits im November 1996 einstimmig deren Überarbeitung verlangte. Ein Streitgegenstand, der in Brandenburg von erheblicher Dimension war, war die so genannte „Landeskinderklausel“ der Richtlinien in der Fassung von 1996. Diese schrieb vor, dass bei geförderten Veranstaltungen mit bis zu 30 Teilnehmern alle ihren Wohnsitz in Brandenburg haben mussten, bei mehr als 30 Teilnehmern mindestens die Hälfte. Diese Vorschrift kollidierte mit dem engen Beziehungsgeflecht der Trägerlandschaft im Raum um Berlin und längs der Grenze zu Polen. So konnten wegen dieser Klausel 1996 nach Auswertung der Teilnehmerlisten 44 Veranstaltungen von 16 Trägern nicht als förderwürdig anerkannt werden. In besonderem Maße war die Deutsch-Polnische Gesellschaft betroffen, die mit der Einbeziehung polnischer Teilnehmer ausdrücklich den Grundsätzen der Landesverfassung, jedoch nicht der „Landeskinderklausel“ entsprach.

Ein weiteres Problem waren die restriktiven *Ausschlussbedingungen* für die Projektförderung. Erst die vom Landtag geforderte Neufassung der Förderrichtlinie ermöglichte die Förderung von Studienreisen zu Zwecken der politischen Bildung. Ferner konnten nun bei Maßnahmen mit internationalen oder länderübergreifenden Bildungsinhalten auch Reisekosten gefördert werden.

Auch die *Träger* mussten ihren Umgang mit den Förderrichtlinien vervollkommen. Viele mussten insbesondere lernen, komplementäre Fördermöglichkeiten zu nutzen, d. h. nicht nur andere „Fördertöpfe“ im Land, sondern auch Bundes- oder Europamittel vor allem aus regionalen Programmen in die Projektförderung einzubeziehen.

Das Bestreben, die Förderregeln weiterzuentwickeln, führte zu neuen Richtlinien am 24. Juni 1997 und schon ein halbes Jahr darauf wieder zu einer Neufassung vom 2. Januar 1998. Diese war aber wiederum umstritten, weil sie die politische Förderung von Jugendprojekten ausschloss. Diese Regelung kollidierte jedoch mit der zunehmenden Verbreitung von rechtsextremistischem Gedankengut unter Jugendlichen, was gerade für die politische Bildung eine Herausforderung darstellte. Nachdem der Gegensatz in der Öffentlichkeit auf Unverständnis gestoßen war, räumten ihn die Beteiligten einvernehmlich aus der Welt. Eine Förderung durch die Landeszentrale war nunmehr möglich, wenn das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keine Mittel zur Verfügung stellen konnte, das Projekt aber befürwortete.

Der entscheidende Schritt bei der Suche nach einer effektiven, unbürokratischen und trägerfreundlichen Förderrichtlinie erfolgte mit der am 1. Januar 2002 in Kraft getretenen Förderrichtlinie. An die Stelle der bisher praktizierten Fehlbedarfs- trat die teilnehmerbezogene Finanzierung. Nach diesen Prinzipien wird die Förderung von Projekten politischer Bildung seitdem gehandhabt. Sie haben sich bewährt.

Nicht zuletzt infolge permanenter Mittelkürzungen befand sich die Landeszentrale in einer Situation, in der die Zahlen der Förderanträge und der Bewilligungen immer mehr auseinander trifteten. Dies führte zwar dazu, dass immer mehr Anträge abgelehnt werden mussten. Zugleich mussten im Rahmen der von der Richtlinie festgelegten Schwerpunkte und der vorgegebenen inhaltlichen und regionalen Ausgewogenheit immer höhere Qualitätsmaßstäbe angelegt werden. Ziel der Landeszentrale im Umgang mit den Anträgen ist es, deren Bearbeitung so einfach wie möglich und zugleich so präzise wie nötig zu gestalten. Qualitätskonferenzen aller verantwortlichen Mitarbeiter der Landeszentrale entscheiden deshalb seit langem gemeinsam, welchen Förderanträgen entsprochen wird.

#### 4.4 Probleme

Ein permanentes Problem mit existenziellen Dimensionen für viele Träger politischer Bildung war ihre ständig schrumpfende finanzielle Ausstattung. Waren 1993 noch ca. 5,6 Millionen DM Gesamtfördermittel ausgereicht worden, so waren es 1999 nur noch ca. 4,1 Millionen DM. Diese Haushaltsentwicklung kollidierte mit der Entfaltung der Trägerlandschaft. Da die Zahl der förderberechtigten parteinahen und der kommunalpolitischen Stiftungen konstant blieb oder abnahm, trugen die freien Träger die Hauptlast der Sparmaßnahmen. Allein im Zeitraum 1995 bis 1998 musste die Landeszentrale etwa 40 % der Mittel für Projektförderungen einsparen. Zusätzlich erschwerten Haushaltssperren die Handlungssicherheit der Träger und die Entscheidungen der Landeszentrale. In höchstem Maße einschneidend war die Sperre vom Sommer 1996. Weil nach der allgemeinen Verkündung ihre konkrete Höhe im Förderbereich nicht feststand, musste die Landeszentrale im ungünstigsten Fall davon ausgehen, ihre Förderung gänzlich einstellen zu müssen. Unter den Trägern breitete sich Existenzangst aus. Wenn es auch dazu nicht kam, so war die Verringerung der Mittel für Projektförderung um über 600 000 DM die schmerzhafteste in der Geschichte der Landeszentrale.

Zwar gab es neben der Projektförderung durch die Landeszentrale die Möglichkeit der Förderung auf der Grundlage des Brandenburgischen Weiterbildungsgesetzes von 1993, das auf die Gewährleistung der regionalen Grundversorgung der Weiterbildung ausgerichtet war. Jedoch waren die freien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wegen ihrer überregionalen, themen- oder klientelspezifischen Orientierung nur in Ausnahmefällen Nutznießer dieses Gesetzes. Von den 60 Projektträgern, die 1997 durch die Landeszentrale gefördert wurden, waren lediglich sieben als Träger der Weiterbildung durch dieses Gesetz anerkannt. So hing die Arbeitsfähigkeit der großen Mehrzahl der freien Träger von der Förderung durch die Landeszentrale ab.

#### 5. Veranstaltungen, Ausstellungen, 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5.1 Kooperationsveranstaltungen als Ausgangspunkte

In der Konstituierungsphase der Landeszentrale dominierten Veranstaltungen in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zentrale und vor allem mit der Partnerzentrale. Veranstalter waren überwiegend nordrhein-westfälische Institutionen; die Landeszentrale trug die Finanzierung anteilig mit. Oft handelte es sich um Veranstaltungsreihen, die sich seit Jahren bewährt und nun fortgeführt wurden. So wurden zu den traditionsreichen „*Bonner Lehrerseminaren*“ nun auch Brandenburger Lehrer eingeladen. Die Seminare veranschaulichten – auch mit Teilnahme an Sitzungen von Bundestag und Bundesrat und Begegnungen mit Abgeordneten – politische Sachverhalte und Problemlagen. Sie ermöglichten einen unmittelbaren Eindruck vom Funktionieren politischer Institutionen. Seit der deutschen Vereinigung waren sie auch Orte der Begegnung zwischen Menschen aus Ost und West. Die Hälfte der verfügbaren Plätze blieb deshalb Teilnehmern aus den neuen Ländern vorgehalten.

Diese wie auch andere Veranstaltungen basierten meist auf konzeptionellen Vorarbeiten der Partner, die nun die Interessenlage der neuen Länder berücksichtigten. 1992 war der am häufigsten angebotene inhaltliche Schwerpunkt der europäische Einigungsprozess, oft in Verbindung mit Fragen von Ausländerpolitik und Integration. Dazu gehörten z. B. die Seminare „Deutsche und europäische Einigung – Bürger und Staat im Wandel“, „Sozialraum Europa“, „Auslände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oder „Was heißt Integration?“. Wie auch



die Bonner Lehrerseminare richteten sich diese Veranstaltungen oft an spezielle Zielgruppen wie Kommunalpolitiker, Polizeibeamte, Gewerkschafter oder Ausländerbeauftragte, auch an ausländische Mitbürger. In der Regel fanden die Veranstaltungen in verschiedenen Orten Nordrhein-Westfalens statt, einige auch am Europa-Institut Berlin. 1992 war Prieros bei Königs Wusterhausen der einzige Veranstaltungsort im Land Brandenburg. Hier fand u.a. ein Seminar für Betriebsräte und Gewerkschafter aus Brandenburg und Nordrhein-Westfalen über aktuelle sozialpolitische Fragen statt.

Die enge Zusammenarbeit, in der die Landeszentrale des Partnerlandes ihr Potenzial Brandenburger Interessenten öffnete, wurde vor allem für bestimmte Multiplikatorengruppen für längere Zeit fortgesetzt. Vorrangige Zielgruppe waren Lehrer. So boten die Landeszentralen und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zusätzlich zu den „Bonner Lehrerseminaren“ seit 1994 die „*Berliner Lehrerseminare*“ an; ihre thematischen Schwerpunkte waren z. B. 1996 das jüdische Leben in Berlin, die Zukunft der westlichen Demokratie, Gewalt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Auftrag und Arbeitsweise des Bundesbeauftragten für die Stasiunterlagen. Die von der Landeszentrale Nordrhein-Westfalen für Pädagogen aller Bundesländer konzipierten „*Europa-Lehrerseminare*“ zu Frage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fanden in Bonn und Brüssel statt. In den Seminaren „*Polnische Deutschlehrerinnen und -lehrer überprüfen ihr Deutschlandbild*“ konnten sich diese ein authentisches Bild über die Entwicklung in Brandenburg und Nordrhein-Westfalen machen.

Über Jahre gab es auch noch die Seminare „*Landeshauptstadt transparent*“ für kommunale Führungskräfte und leitende Mitarbeiter der Landesregierung. Parlamentarier, Mitarbeiter der Exekutive, von Verbänden, Medien und Wissenschaftler machten anhand ihrer Tätigkeit politische Zusammenhänge deutlich.

In den 1990er-Jahren wurden weitere Kooperationsbeziehungen hergestellt. Diese richteten sich oft an bestimmte Zielgruppen wie Jugend- und Sozialarbeiter, Lehrer, Soldaten. So gab es seit 1992 in Zusammenarbeit mit der *Bundeswehr* Trainingseinheiten zur politischen Bildung für Offiziere der Bundeswehr im ostbrandenburgischen Kienbaum. 1996 wurden neben den genannten die folgenden Kooperationsveranstaltungen durchgeführt:

- eine Veranstaltung zur Gedenkstättenpädagogik in Zusammenarbeit mit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Berlin und der Stiftung Brandenburgische Gedenkstätten;
- ein mehrtägiges internationales Seminar für Polizeiangehörige aus mehreren Bundesländern und aus Polen, Weißrussland, der Ukraine und des Benlux-Staaten in Kooperation mit den Landes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und Nordrhein-Westfalen;
- Veranstaltungen zur Qualifizierung von Führungs- und Lehrkräften der Landespolizei Brandenburg mit einer Reihe kooperierender Institutionen, z. B. der Ausländerbeauftragten;
- die Fachtagung „Vorreiter einer gemeinsamen Zukunft – Zur Arbeit der Gemeinsamen Landesplanungsabteilung“ über die Auswirkung von deren Arbeit auf Verbände, Vereine und 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in Kooperation mit dem 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Brandenburg und der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mweltschutz und Technologie Berlin;
- die gemeinsame Tagung mit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 in Zusammenarbeit mit den Volkshochschulverbänden beider Länder zum Thema „Das Selbstverständnis der politischen Bildung an Volkshochschulen“ über den Einsatz moderner Methoden bei der Vermittlung politischer Bildungsinhalte;
- „Deutsche Einheit – ohne Einheit der deutschen Geschichte?“, eine Fachtagung für Politiklehrer und Multiplikatoren in Kooperation mit der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ordrhein-Westfalen, den beiden Landesinstituten für Lehrerfortbildung, den

Landesverbänden für Geschichtslehrer und der Deutschen Vereinigung für politische Bildung über die Wandlung geschichtlicher Interpretationen i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 in Zusammenarbeit mit dem Bildungsministerium und der RAA die Fachtagung über die NS-Zeit und das Ende der poststalinistischen Diktaturen in der politischen Bildung unter dem Titel „Im Jahr nach dem 50. Jahrestag der Befreiung – wie weiter?“

Weitere Kooperationspartner für einzelne Veranstaltungen oder Reihen in den 1990er-Jahren waren u. a. im Land Brandenburg der Arbeitslosenverband, das Oberstufenzentrum Uckermark, das Petrochemische Kombinat Schwedt, in den alten Ländern das Bildungsforum Gelsenkirchen, die Volkshochschule Soest, die Akademie des Deutschen Beamtenbundes Schleswig-Holstein.

In dem Maße, in dem die Landeszentrale ihre knapper werdenden Mittel unter konzentrierter Berücksichtigung ihrer gesetzlichen Aufgaben einsetzte und die Kooperationspartner eigene Verantwortungen für ihre speziellen Bildungsaufgaben übernahmen, wurden einige dieser Kooperationsbeziehungen nicht weiter fortgeführt. Und zeitgleich mit den Kooperationsveranstaltungen konzipierte die Landeszentrale ihr eigenes Veranstaltungsprofil, das an den spezifischen Belangen Brandenburgs orientiert war und im Unterschied zur Vielgestaltigkeit der Anfangszeit stärker auf Kernfragen politischer Bildung konzentrierte.

## 5.2 Konferenzen und Tagungen

Im Veranstaltungsspektrum der Landeszentrale nahmen die Konferenzen und Tagungen einen besonderen Rang ein. Sie erstreckten sich zuweilen über mehrere Tage, fanden in einem größeren öffentlichen Rahmen statt und wurden oft gemeinsam mit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des Landes Brandenburg oder anderen kompetenten Partnern auch aus dem Ausland durchgeführt. Ihr Ziel war es, umfassende politisch-kulturelle oder historische Themenkomplexe zu diskutieren, um mit den erzielten Lösungsansätzen zu Erkenntnissen über die jeweilige Materie beizutragen und Multiplikatoren und Interessenten anzuregen, sich mit ihr weiter zu befassen. Nicht selten wurden ihre Beiträge deshalb in 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dokumentiert.

Die Konferenzen konzentrierten sich vor allem auf drei thematische Komplexe: auf aktuelle Fragen der deutschen und der europäischen Entwicklung, auf zeitgeschichtliche Probleme und deren Bezug zur Gegenwart sowie auf die Weiterentwicklung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n Brandenburg. Von einigen Konferenzen war bereits die Rede: „Brandenburg – Preußens Erbe?“ und den Seniorenkonferenzen. Die folgenden Beispiele sollen die inhaltliche Ausgestaltung der drei Themenkreise, die Fülle partnerschaftlicher Beziehungen bei der Umsetzung und die konzeptionelle und didaktische Vielfalt der Veranstaltungen weiter veranschaulichen.

Mit *aktuellen Problemen* befasste sich z. B. die Konferenz „Europa-Wahlen 1994. Brandenburg auf dem Weg nach Straßburg“, die gemeinsam mit der Berlin-Brandenburgischen Auslandsgesellschaft organisiert wurde. Über 300 Multiplikatoren, Vertreter von Parteien und Verbänden sowie interessierte Bürgerinnen und Bürger diskutierten in dieser zweitägigen Veranstaltung im Vorfeld der Europa-Wahlen vom Juni 1994 eine breite Palette europapolitischer Themen und die Perspektiven des 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es. Brandenburger Kandidatinnen und Kandidaten stellten die Schwerpunkte ihrer künftigen parlamentarischen Arbeit vor. Einen internationalen Rahmen hatte auch die 1996 durchgeführte mehrtägige Konferenz „Integration und Wandel in postkommunistischen Gesellschaften“, die nicht nur den konfliktreichen Transformationsprozess in den Ländern

Ost- und Ostmitteleuropas zum Inhalt hatte, sondern auch dessen Auswirkungen auf ganz Europa. Sie fand in Partnerschaft mit dem Berlin-Brandenburgischen Institut für Deutsch-Französische Zusammenarbeit statt. Ebenfalls auf ein gesamteuropäisches Themenfeld ausgerichtet war die Konferenz „Osterweiterung der NATO“, veranstaltet gemeinsam mit dem Potsdamer Verein WeltTrends und dem Westinstitut in Poznan/Polen. Über die Frage der Osterweiterung der NATO hinausgehend diskutierte sie auch eine Erweiterung der EU nach Osteuropa.

Vor allem Jahrestage boten Anlass, sich markanten Zäsuren in der *Geschichte* und deren Nachwirkung auseinander zu setzen. So führten die Partnerzentralen Brandenburg und Nordrhein-Westfalen im Potsdamer Landtag eine gemeinsame Konferenz zum 50. Jahrestag des Attentats auf Hitler durch. Unter dem Titel „Das andere Deutschland. Der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 Mythos und Vermächtnis“ wandte sie sich vor allem der Frage zu, wie in beiden deutschen Staaten der Widerstand unterschiedliche gesellschaftliche Aneignung erfuhr und auch politisch instrumentalisiert wurde. Die Beiträge dieser Konferenz wurden publiziert. Zum 50. Jahrestag der Potsdamer Konferenz fand das internationale Symposium „Potsdam 1945 – 1995“ statt, das die Landeszentrale und das Historische Institut der Universität Potsdam in Zusammenarbeit mit der Stiftung Preußische Schlösser und Gärten im Schloss Cecilienhof durchführten. Deutsche, polnische, russische und britische Fachleute referierten zur Deutschland- und Europapolitik am Ende des Zweiten Weltkrieges und spannten einen Bogen zur Gegenwart.

Mehrere Konferenzen setzten sich mit Grundfragen der *politischen Bildung* und mit effektiven Wegen ihrer praktischen Gestaltung auseinander. Nach dreijähriger Aufbauphase zogen Landeszentrale und freie Träger in einer dreitägigen Konferenz in Beeskow Bilanz der bisherigen Arbeit und diskutierten Probleme und künftige Arbeitsschwerpunkte. Ende 1996 setzte eine Konferenz mit dem Arbeitskreis deutscher Bildungsstätten und dem Bildungsforum Potsdam die Debatte fort, beriet die weitere Profilierung, neue Methoden und Kooperationsmodelle. Der wachsenden Bedeutung des Rechtsextremismus in der Arbeit aller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nahm sich die Fachtagung „Rechtsextremismus im Internet“ im Juni 1999 an. Mit einer Bestandaufnahme der entsprechenden pädagogischen Initiativen sowie der Aktivitä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der Bundeswehr verknüpfte sie die daraus abzuleitenden aktuellen Aufgaben für die Landeszentralen.

### 5.3 Neues Haus – neue Veranstaltungsstruktur

Mit dem Umzug in das neue Haus in der Heinrich-Mann-Allee stand ab 1996 ein repräsentativer Raum für etwa 70 Besucher zur Verfügung, der zu Ideen über verschiedene Arten von Veranstaltungen herausforderte. Deshalb entwickelte die Landeszentrale einen geregelten Turnus von Veranstaltungen unterschiedlicher thematisch-methodischer Reihen. Zum Teil setzten diese bereits bestehende, in fremden Räumlichkeiten durchgeführte Reihen fort bzw. entwickelten diese weiter. Andere wurden neu konzipiert. An jedem jeweils ersten bis vierten Mittwoch im Monat fand eine dieser Reihen statt. Donnerstags wurden Kolloquien, Foren oder Fachtagungen durchgeführt. Diese zyklische Form ermöglichte den Interessenten, sich langfristig auf Veranstaltungen ihrer Wahl einzustellen. Und weil in den öffentlichen Räumen der Landeszentrale Ausstellungen zu sehen waren, konnten die Gäste den Besuch von Veranstaltungen mit dem von Ausstellungen verbinden.

Der jeweils erste Mittwoch war der Reihe „*KunstMachtPolitik*“ gewidmet. Als Instrumente schöpferischen und freien Denkens und Gestaltens wurden Kunst und Kultur hier zu nachhaltig wirkenden Medien politische Bildung. Der Zyklus knüpfte an die Reihe „*Deutsche*

*Widersprüche – deutsche Liedersprüche*“ an, die es bereits seit 1991 gab. Diese verband Populär- und Kleinkunst mit spezifischen Hochkulturangeboten und präsentierte genreübergreifende Formen von Kunst und Kultur mit dem Anspruch, in politische Diskurse einzugreifen. Bekannte Künstler aus dem deutschsprachigen Raum, unter ihnen Konstantin Wecker, Stephan Krawczyk und Gerhard Gundermann, gaben in diesen „Werkstätten für politische Kunst“ Konzerte und diskutierten, wie sich politische Entwicklungslinien und auch Diskrepanzen in der Kunst widerspiegeln und auf welche Weise Kunst auf Politik und Gesellschaft wirkt. Weil viele dieser Veranstaltungen in Kooperation mit einem Radiosender stattfanden, hatte ein Interessentenkreis weit über Potsdam oder das Brandenburg hinaus Zugang zu ihnen. Sendungen über oder aus der Werkstatt strahlten neben den Sendern der Region der Deutschlandfunk Köln, der Mitteldeutsche und der Schweizer Rundfunk aus. Außerdem wurden Protokolle, Aufsätze und Betrachtungen der 1994er Veranstaltung von der Landeszentrale publiziert. Die Werkstattreihe wurde Ende 1995 als „KunstMachtPolitik“ weitergeführt, die sich in ihrer ersten Veranstaltung unter dem Titel „Deutschland: Außensichten – Innensichten“ mit der historischen und politischen Zuordnung künstlerischer Ausdrucksformen auseinander setzte. 1996 wurde die Reihe – nunmehr im neuen Haus der Landeszentrale – mit vier Veranstaltungen unter dem Motto „Ordnung und Chaos“ fortgesetzt.

Der „*Politische Salon*“ - an jedem zweiten Mittwoch – bot Möglichkeiten an, mit Persönlichkeiten oder Vertretern von Bürgerinitiativen zusammenzukommen. Diese stellten ihre für die politische Kultur beispielhaften Aktivitäten vor und empfahlen sich so der Aufmerksamkeit der Öffentlichkeit, auch der Politik und Verwaltung. Die Präsentation von kreativem Handeln war geeignet, zu ähnlichem Engagement anzuregen, Impulse für mutige, vielleicht risikobehaftete Projekte zu geben oder das Handeln verschiedener Interessengruppen miteinander zu verbinden.

Der „*Medien-Mittwoch*“, der jeweils am dritten Mittwoch stattfand, gab Medienpraktikern ein Forum, ihre Werke zu präsentieren, sich darüber auszutauschen oder neue Trends in der Medienentwicklung zu ergründen. Junge Filmemacher erhielten ein Podium zu Kontakten mit der Öffentlichkeit. Die Veranstaltungen fragten nach den Möglichkeiten, die die neuen Medien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n für die demokratischen Willensbildung und politische Partizipation boten. Es gab Filmpremieren, Videoabende, Hörspiele usw.

Der vierte Mittwoch war dem Zyklus „*nachLese. Das politische Buch*“ vorbehalten, der eine Brücke bauen wollte zwischen Autoren politischer Bücher und ihren Lesern. Publikationen und Publikationsreihen der Landeszentrale, wurden hier vorgestellt. Autoren erhielten Gelegenheit, sich und ihre Werke zu präsentieren; Verlage konnten Leser mit ihren Programmen bekannt machen.

In den folgenden „nachLese“-Veranstaltungen stellten die Autoren die ersten Hefte der von der Landeszentrale herausgegebenen Publikationsreihen „Brandenburgische Historische Hefte“ und „Internationale Probleme und Perspektiven“ vor und stellten sich den Fragen der Besucher.

In den Veranstaltungen der Reihe „*Colloquium Brandenburg*“ diskutierten Vertreter von Legislative und Exekutive mit Wissenschaftlern und Interessenten über spezifische Problemfelder der Landes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auf Kommunal- und Bundespolitik. Die Reihe wurde bereits 1992 entwickelt.

In den halbtägigen Veranstaltungen der Reihe „*Forum Politik*“ wurden aktuelle innen- und außenpolitische Fragen in Vorträgen und Podiumsdebatten zur Diskussion gestellt. Wie auch in den anderen Reihen wurden Vertreter aus Wissenschaft, Wirtschaft, Kultur und politischer Praxis eingeladen. In der Folgezeit sollten diese aktuellen Bezüge die Inhalte der Reihe stärker prägen. Sie wurde deshalb als „Forum aktuelle Politik“ fortgeführt.

Das Konzept wurde durch die Reihe „*Europäische Entwicklungen*“ ergänzt, die – ebenso wie „Colloquium Brandenburg“, „Forum aktuelle Politik“ und „nachLese. Das politische Buch“ auf Dauer zum Veranstaltungsspektrum der Landeszentrale gehören sollte. Ihre Themen orientierten sich vorrangig an den engen geschichtlichen, politisch-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Brandenburgs zum osteuropäischen Raum. Ihre Veranstaltungen provozierten auch mit ihren Fragestellungen, beispielsweise, inwieweit sich politische Modernisierung in Osteuropa an westliche Leitbilder anlehnen sollte, welche deutschen Interessen die Osterweiterung von EU und NATO beeinflussten oder ob eine europäische Identität „Realität oder Mythos“ sei. Auch aktuelle „europäische Entwicklungen“ wurden thematisiert wie 1999 „Russland vor den Parlamentswahlen“.

Nicht nur mit Veranstaltungen im neuen Haus der Landeszentrale, auch in den Regionen des Landes gab es weiterhin Veranstaltungen. An den Orten ihrer Handlung wurden Publikationen im Rahmen von „*nachLese unterwegs*“ vorgestellt.

#### 5.4 Kunst als Ausdrucksmittel politischer Bildung

Formen von Kunst waren von Anfang an in das Konzept der politischen Bildung in Brandenburg eingebunden, sie prägten ihr Erscheinungsbild in der Öffentlichkeit und wurden als ein Brandenburger Charakteristikum in den anderen Landeszentralen wahrgenommen und geschätzt. Kunst als politisches Ausdrucksmittel fand sich nicht nur in den Programmen der Landeszentrale, sondern gehörte auch zu den Förderkriterien. Äußerst vielgestaltig waren – neben den Reihen „KunstMachtPolitik“ und „Medien-Mittwoch“ sowie den Ausstellungen – vor allem Mitte der 1990er Jahre Angebote der Landeszentrale, die sich Ausdrucksmitteln der Kunst bedienten.

Zu den *Großveranstaltungen* mit überregionaler Resonanz gehörte das mehrtägige *Perleberg-Festival*. Es wurde gemeinsam mit der Ausländerbeauftragten des Landes und der Stadt Perleberg veranstaltet und fand in jährlichem Turnus statt. Mit Folk und internationaler Musik präsentierte sich Brandenburg hier als tolerantes Land, in dem Ausländerfeindschaft und rechte Gewalt keinen Platz haben. Eine weitere große Veranstaltung fand anlässlich des 50. Jahrestages der DEFA statt. Sie spannte einen Bogen von der langen Geschichte des Medienstandortes Babelsberg bis zu seinen Perspektiven im vereinten Deutschland.

Infolge von Mittelkürzungen konnten einzelne Vorhaben nicht oder nur in vermindertem Umfang fortgeführt werden. Einen Einschnitt stellte vor allem die neue Fachbereichsstruktur ohne den Fachbereich Kultur und Medien dar. Das permanente „Markenzeichen“ politischer Bildung in Brandenburg, das hohes Ansehen genoss, bildeten weiterhin die Ausstellungen.

#### 5.5 Ausstellungen

Unter den künstlerischen Ausdrucksformen politischer Bildung gewannen die Ausstellungen einen immer höheren Stellenwert als Standard politischer Bildung im Land Brandenburg. Sie entsprechen in ganz besonderer Weise dem von der politischen Bildung praktizierten Umgang mit Bildungsinhalten, weil sie keine Denkmuster vorgeben, sondern Anstöße vermitteln, die

dem Betrachter eigene Schlussfolgerung überlassen. Das ehemalige Offizierskasino ist der ideale Ort für umfangreiche, inhaltlich vielseitige und interessante Ausstellungen, die von Potsdamern und auswärtigen Besuchern besucht und – wie ein Blick in das Besucherbuch beweist – sehr geschätzt werden. Beim Abholen von Literatur nutzt mancher die Gelegenheit, die aktuelle Ausstellung anzuschauen. Und nicht wenige suchen eigens wegen der Ausstellungen die Landeszentrale auf. Schulklassen und andere Gruppen bitten um Führungen. Der erzielte Bildungseffekt wird durch begleitende Veranstaltungen und Publikationen vertieft. Die Ausstellungseröffnungen gehören zu den Höhepunkten im Jahresprogramm der Landeszentrale. Einzelne Ausstellungen werden nach ihrer Präsentation in der Landeszentrale als Wanderausstellungen in anderen Orten Brandenburgs gezeigt.

Noch bevor die Landeszentrale ihr neues Domizil bezog, gab es die ersten großen Ausstellungen. Eine solche wurde im Sommer 1995 in der Petrikapelle und im Dom von Brandenburg a. d. Havel gezeigt. Unter dem Titel „Seid ihr alle weg?“ war eine breite Palette politisch inspirierter Bilder zu sehen, deren Schöpfer im Land geblieben oder eine neue Heimat gefunden hatten und nun politisch-künstlerische Akzente setzten. Die erste Ausstellung im neuen Haus der Landeszentrale wurde am 2. September 1996 eröffnet. Der Fotograf Joachim Richau hatte Alteingesessene und Zugezogene aus dem kleinen Ort Beerfelde in den Jahren 1984 bis 1994 mit der Kamera begleitet. Die Ausstellung „Bürger von Beerfelde“ stellte nun den Bezug zwischen persönlichen und politischen Entwicklungen und Wendepunkten her. Die nächste Ausstellung „Ein preußisches Narrenschiff“ mit ernsthaft-nachdenklichen und zugleich hintergründig-humorvollen Zeichnungen und Grafiken des Kleinmachnower Künstlers Rainer Ehrh nahm das in der Nachwendezeit umstrittene Phänomen „Preußen“ aufs Korn. Gesprächsstoff auf dem gesamten Campus bot die Ausstellung „Stühle der Macht“. In und außerhalb der Landeszentrale aufgestellte unterschiedliche Sitzgelegenheiten symbolisierten komplizierte Herrschaftsgefüge mit stabilen und „wackligen“ Thronen für „große“ und „kleine“ Mächtige. Bereits diese Ausstellungen führten auch potenziellen Zweiflern vor Augen, mit welcher Vielfalt an Ausdrucksformen politische Bildung agieren kann.

## 5.6 Publikationen

Der Ankauf von Publikationen und ihre Vergabe an interessierte Bürgerinnen und Bürger leistet einen wirkungsvollen Beitrag, über politische, historische, wirtschaftliche, ökologische und kulturelle Themen zu informieren. Durch die Vergabe von Klassensätzen wurden Schulen und Organisatoren von Bildungsveranstaltungen unterstützt. Eigen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setzen inhaltliche Schwerpunkte der politischen Bildung in Brandenburg. Die bereitgestellten Publikationen umfassen etwa 100 Buchtitel. Ihre inhaltliche Palette umspannt einen weiten Boden. Er erstreckt sich von spezifischen landespolitischen Themen über Kernfragen der Demokratie und des politischen Systems, Probleme bestimmter gesellschaftlicher Gruppen, historischen Fragestellungen bis zu Gegenständen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insbesonder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Die Nachfrage nach den angebotenen Publikationen stieg deshalb permanent.

Noch in der Anfangsphase der Landeszentrale wurden im Zusammenwirken der im Aufbau begriffenen Fachbereiche erste *eigene Publikationen* herausgegeben, darunter bereits eine zweisprachige in deutsch und polnisch und „Bei uns drüben“, eine Broschüre, in der Menschen aus Ost und West ihre jeweilige Sicht auf politische Begriffe darstellten. In jenen frühen Jahren prägten auch die Publikationen, die aus Aktivitäten des jungen Fachbereichs Kultur hervorgegangen waren, die öffentliche Wahrnehmung der Landeszentrale. Bereits 1992 erschien die Anthologie junger Schreibender der Oderregion „Gesicherte Verhältnisse“

und der Band „Land ohne Übergang“ mit kommentierten Fotos der zerstörten Brücken an der deutsch-polnischen Grenze, 1993 unter dem Titel „Flügel Schlag“ sehr anregende Gedanken und Bilder Potsdamer Schüler und die Fotochronik „Die Russen gehen“ und seitdem bis heute die ausstellungsbegleitenden Publikationen. Von großer Bedeutung in der Konzeption vor allem der frühen Publikationen war die Zielstellung, die Brandenburger mit den für sie neuartigen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n vertraut zu machen und ihnen durch praxisbezogene Informationen den Umgang damit zu erleichtern wie in „Du und dein Bundesland“. Dazu gehörten auch die viel gefragten Schriften, die Landeskunde und -geschichte mit Informationen zum politischen System miteinander verbanden und seitdem in immer neuen Auflagen zum Standardangebot der Landeszentrale gehörten. Solche Überblicksdarstellungen wurden ergänzt durch spezielle Publikationen zur Landes- und zur Kommunalverfassung. Etliche Publikationen setzten sich mit der Geschichte Brandenburgs auseinander. Die Bände „Brandenburg in der NS-Zeit“ und „Was bleibt ist Hoffnung“ mit beschlagnahmten Briefen aus Brandenburger Haftanstalten während der NS-Zeit, 1993 und 1994 erschienen, konnten sich auf eine Vielzahl bislang unbekannter Quellen stützen. Die letzte Publikation war so stark nachgefragt, dass sie noch im Erscheinungsjahr nachgedruckt werden musste. Eine Vielzahl neuer Quellen – teils erst damals aus Moskauer Archiven aufgetaucht – erschloss auch der „Sammelband „Brandenburg im Jahr 1945“, 1995 erschienen, der sich eines sehr großen Interesses erfreute. Herausragende Bedeutung kam den vielen Publikationen zur Geschichte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und zur DDR zu, insbesondere jenen mit neuen Untersuchungen zur Repressivmaschinerie der Besatzungsmacht und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Oft dienten diese Schulen und Multiplikatoren als Grundlage für Veranstaltungen und wurden deshalb in Klassensätzen bestellt. Besondere Erwähnung verdienen die folgenden. Die 1997 erschienene Broschüre „Speziallager des NKWD“ war die erste komplette Darstellung der 1945 bis 1949 in Brandenburg existierenden sowjetischen Internierungslager. „Jugend im Visier der Stasi“ (2001) schildert eindrucksvoll, wie der Staatssicherheitsdienst sein Überwachungssystem bis in Schulen und Jugendeinrichtungen ausdehnte. In der Broschüre „Von Potsdam nach Workuta“ werden in Erinnerungen deutscher und russischer Häftlinge des KGB-Gefängnisses in der Potsdamer Leistikowstraße die Leiden Betroffener, die Folterpraktiken mit erzwungenen Geständnissen lebendig, die oft mit Todesurteilen oder Deportationen in russische Straflager endeten. Weil es eine ähnliche Publikation bis heute nicht gibt, diente sie über Jahre als einziges Begleitbuch in der heutigen Gedenkstätte. Auch einer breiten Palette aktueller Probleme und Fragestellungen wandten sich die Eigenpublikationen zu, z. B. Studien zur Situation von Jugendlichen in Brandenburg oder in „Vergangenheitsbewältigung 1945 – 1989. Ein unmöglicher Vergleich?“ dem diffizilen Problem von Diktaturvergleichen. Eine besondere Position in der langen Liste der Eigen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nimmt die Broschüre „Jüdische Kultur und Geschichte“ ein. Sie erschien seit 1995 in vielen Auflagen, wurde von den meisten Zentralen politischer Bildung nachgedruckt und vom Autor Peter Ortog inzwischen um „Islamische Kultur und Geschichte“ und „Christliche Kultur und Geschichte“ ergänzt.

Noch vor ihrem Umzug in das neue Domizil entwickelte die Landeszentrale drei Eigenpublikationsreihen. Zuerst entstand die Reihe „*Internationale Probleme und Perspektiven*“. Sie hat vornehmlich Themen mit einem Bezug zur spezifischen Interessenlage Brandenburgs auf europäischer oder globaler Ebene zum Inhalt. 1993 wurde sie mit „Umbruch in Ungarn. Hintergründe, Kräfte, Resultate“ eröffnet. Das Thema wies auf einen konzeptionellen Schwerpunkt der Reihe hin. Neben grundsätzlichen Themenstellungen der internationalen Politik wie der wachsenden Bedeutung der Nichtregierungsorganisationen in „NGOs – eine neue Weltmacht?“ (Heft 11) prägten die Länder des früheren Ostblocks mit

ihren historisch und geografisch bedingten engen Beziehungen zu Brandenburg wesentlich die Inhalte der Reihe.

Rasche Anerkennung fand die Reihe „*Brandenburgische historische Hefte*“. Sie machte deutlich, wie sich markante geschichtliche Vorgänge in den Regionen des Landes oder einzelnen Orten vollzogen, wie die Brandenburger historische Ereignisse erlebten und was sie selbst in die Geschichte einbrachten. Inhaltliche Schwerpunkte waren die Zeiten des Nationalsozialismus,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und der DDR. Die Reihe wurde 1995 eröffnet mit der Schrift „Evangelische Christen zwischen Anpassung und Opposition“.

Die Broschüren der Reihe „*Protokolle*“ dokumentierten meist wichtige Veranstaltungen der Landeszentrale. Seit 1994, als die Beiträge der Konferenz „Brandenburg – Preußens Erbe?“ die Reihe eröffneten, erschienen die Hefte etwa im Jahresturnus mit einem sehr breiten inhaltlichen Spektrum zu Problemen der Geschichte und aktuellen Politik.

Am Zustandekommen etlicher Publikationen der Landeszentrale hatten ihre Mitarbeiter unmittelbaren aktiven Anteil als Herausgeber, Mitherausgeber, als Verfasser einzelner Kapitel wie bei der „Kleinen Geschichte des Brandenburger Landtages“ (1999) und auch als Autoren kompletter Broschüren. So stammten „Du und dein Bundesland“ (1992) und „Brandenburgs Landesverfassung in Geschichte und Gegenwart“ (1994) aus der Feder von Mitarbeitern der Landeszentrale.

## 6. Kooperationen mit anderen Institutionen

Mit einer Vielzahl von Institutionen, Einrichtungen und Behörden entwickelten sich schon bald nach der Bildung der Landeszentrale vielfältige Arbeitsbeziehungen. Diese entstanden aus ähnlichen Tätigkeits- und Interessenschwerpunkten und führten zu vielgestaltigen Resultaten, aus denen alle Beteiligten Nutzen zogen.

### 6.1 Zusammenarbeit mit Universität und Fachschulen

Von der räumlichen Nähe und der intellektuellen Verbundenheit zur Universität profitierte die Landeszentrale in mehrfacher Hinsicht. Und auch die Potsdamer Bildungseinrichtungen gebrauchten die Vorteile, die die nahe Landeszentrale bot. So waren die Beziehungen ein für alle Beteiligten nützlich Geben und Nehmen.

In die Arbeit der Landeszentrale floss vor allem geistiges Potenzial der Universität ein. Potsdamer Wissenschaftler erarbeiteten viele *Publikationen*, die die Landeszentrale herausgab, sie traten als Referenten oder Moderatoren von *Veranstaltungen* in der Landeszentrale auf. Auch bei Entscheidungen in komplizierten Problemlagen war ihr sachkundiger Rat gefragt. Kurze Wege und rasch entstandene kollegiale, sogar freundschaftliche Beziehungen hatten den Vorteil, dass viele Wissenschaftler gern bereit waren, bei Notlagen kurzfristig einzuspringen. Besonders eng gestaltete sich die Zusammenarbeit mit den Politologen, den Historikern und dem Moses-Mendelssohn-Zentrum.

Doch auch die Universität war Nutznießer des guten Verhältnisses zur Landeszentrale. Ihre Wissenschaftler konnten in deren Veranstaltungen neue Forschungsergebnisse und Publikationen vorstellen. Studenten gehörten bald zu den Personengruppen, die die Veranstaltungen der Landeszentrale häufig besuchten und ihr Literaturangebot gern nutzten. Sofern sich inhaltliche, auch personelle Parallelen zwischen universitärer Forschung und



freien Bildungsträgern herausgebildet hatten, konnte daraus eine *Förderung* entsprechender Projekte erwachsen.

Fast ständig arbeiten in der Landeszentrale *Praktikanten* von Universitäten. Sie lernen Theorie und Praxis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n einzelnen Fachbereichen kennen und sind geschätzt als engagierte Helfer bei der Verwirklichung der vielen Ideen, die in der Landeszentrale geboren werden. Meist studieren sie sozialwissenschaftliche Fächer. Sie kommen nicht nur aus Potsdam, sondern auch von anderen deutschen Universitäten. Einen guten Ruf hat die Landeszentrale offenbar an der Universität Konstanz, denn von dort haben sich schon etliche Studenten um einen Praktikantenplatz beworben. Die weiteste Anreise hatte bisher 1994 eine Praktikantin aus Sioux Falls in South Dakota, USA.

Schließlich wirkten Mitarbeiter der Landeszentrale an *Lehrveranstaltungen* mit. So wurden ihre Aufgaben und Wirkungsweise im Rahmen von pädagogischen Seminaren der Universität Potsdam vorgestellt. Und in den 1990er-Jahren übernahm ein Mitarbeiter der Landeszentrale über einige Semester einen Lehrauftrag an der Fachhochschul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des Landes Brandenburg.

## 6.2 Landeszentrale und Schulen

Schon bald nach der Gründung der Landeszentrale, vor allem aber nach ihrem Umzug 1996 in das bürgeroffene Gebäude in der Heinrich-Mann-Allee, begannen Schulen in großem Umfang die *Literaturangebote* der politischen Bildung zu nutzen. Neben Studenten gehören Lehrer zu den häufigen Besuchern der Landeszentrale. Sie verwenden die Bücher für die Unterrichtsgestaltung in den Fächern Politische Bildung und Geschichte und bestellen dafür auch Klassensätze. Schüler der oberen Klassen nutzen das Buchangebot der Landeszentrale. Immer häufiger beziehen Lehrer den Besuch von *Ausstellungen* der Landeszentrale in Projektwochen ein. Auch in den *Veranstaltungen* waren und sind Schüler oft zu Gast. Vor allem Veranstaltungen mit Zeitzeugen finden großen Zuspruch. Nicht selten können ganze Klassen begrüßt werden.

Eine neue Phase in der Zusammenarbeit der Landeszentrale mit der Schulbildung war die Beteiligung an der konzeptionellen Ausgestaltung und der Durchführung der *Schülerwettbewerbe* „Spurensuche“ zum 50. Jahrestag des Aufstandes am 17. Juni 1953 und zum 60. Jahrestag des Attentates auf Hitler am 20. Juli 1944. Diese Themen wiesen enge Bezüge zwischen Schulbildung und politischer Bildung auf. Die Schüler sollten der Frage nachgehen, ob in ihrem Ort Bezüge zu diesen Ereignissen zu finden waren und welche Bedeutung diese noch heute haben. Es sollten Dokumentationen entstehen, die möglichst auf Dauer weiter für die Schule oder für die Öffentlichkeit nutzbar blieben. Beide Schülerwettbewerbe fanden rege Resonanz.

## 6.3 Zusammenwirken mit dem Landtag und mit anderen Ministerien

Vielfältige Formen des Zusammenwirkens entstanden schon frühzeitig sowohl mit dem Landtag als auch mit solchen Ministerien, zu denen zwar keine organisatorischen Beziehungen bestanden, aus deren Zuständigkeiten sich aber Parallelen zu den Aufgaben politischer Bildung ableiteten. So entstanden kooperative Verbindungen auf vielen inhaltlichen Gebieten, die zu einer Fülle fruchtbarer Arbeitsergebnisse führten, von denen jeweils beide Partner profitierten. Dafür seien einige markante Beispiele geschildert.

Die Aufgabe der Landeszentrale, zur Herausbildung und Stabilisierung des Landesbewusstseins durch landeskundliche und landesgeschichtliche Informationen beizutragen, hatten Kooperationsbeziehungen mit dem *Landtag* zur Folge. Gemeinsam gaben Landtag und Landeszentrale die „Kleine Geschichte der Brandenburger Landtages“ heraus; ist doch die Geschichte des Brandenburger Parlaments ein Spiegel der Brandenburgischen Landesgeschichte. Ferner war die Landeszentrale an Veranstaltungen des Landtages zur Seniorenarbeit beteiligt.

Mit dem *Kulturressort* entstand eine regelmäßige Zusammenarbeit im Rahmen der landesweiten Veranstaltungsreihen „Kulturland Brandenburg“ mit ihren jährlich wechselnden thematischen Schwerpunkten. Außerdem förderten Landeszentrale und Kulturministerium gemeinsam Projekte mit inhaltlich übergreifenden Themenstellungen.

Zusammen mit dem *Innenministerium* wurde unter dem Titel „Starke Gemeinden in Brandenburg“ eine Broschüre mit Argumenten, Fakten und Erfahrungen zur Kommunalreform herausgegeben.

Im Bereich des *Sozialministeriums* gab es enge Berührungspunkte vor allem mit der Ausländerbeauftragten u. a. mit gemeinsamen Veranstaltungen und der Publikation „Gleichbehandlung statt Diskriminierung“ in der Reihe „Protokolle“.

Unter dem Titel „Aussiedeln, Ansiedeln“ informierte eine Publikation der Landeszentrale über Russlanddeutsche, die in Brandenburg eine neue Heimat fanden. Diese Broschüre entstand in der *Staatskanzlei*.

Bei de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von Veranstaltungen zum 50. Jahrestag des Grundgesetzes, insbesondere der deutschlandweiten Wanderausstellung, die in der Marienkirche Frankfurt/Oder gezeigt wurde, und ihren Begleitveranstaltungen arbeiteten Landeszentrale und *Justizministerium* eng zusammen. Ferner entstand zum 60. Jahrestag der Nürnberger Rassengesetze eine Broschüre.

Über Beispiele gemeinsamer Aktivitäten mit dem *Bildungsministerium* – Buchankäufe und die Schülerwettbewerbe – ist an anderer Stelle berichtet.

## 7. Zusammenarbeit mit den anderen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 7.1 Koordinierungs- und Leiterkonferenzen

Jede 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gestaltet ihre Tätigkeit, deren Inhalte und Methoden in eigener Kompetenz und Verantwortung gegenüber ihrem Land. Dennoch unterliegen sie alle gleichartigen oder ähnlichen Verpflichtungen. Diese resultieren einerseits aus dem generellen Auftrag an die staatlich verantwortete politische Bildung, Menschen zu politischer Teilhabe zu befähigen und zu motivieren, und andererseits aus der Parallelität gesamtnationaler Entwicklungen mit neu entstehenden Schwerpunkten, auf die alle Landeszentralen zu reagieren haben. Nicht zuletzt sind es auch wichtige Jahrestage, die für alle Anlass zu politischer Auseinandersetzung sind. Ähnlich ist auch die Entwicklung der Finanzausstattung. Und schließlich wenden sich Landeszentralen bestimmten inhaltlichen Schwerpunkten ihrer Regionen zu, die sie in ganz besonderem Maße betreffen. Dies trifft z. B. auf die ostdeutschen Landeszentralen zu.

Die Koordinierungs- und Leiterkonferenzen der Landeszentralen sind wichtige Arbeitstagungen. Es werden gemeinsame Aktivitäten und Projekte verabredet und durchgeführt. Ein markantes Beispiel dafür ist die von den Leitern 1999 beschlossene Gründung der Arbeitsgemeinschaft „Politische Bildung online“. Jede Konferenz ist mit einem ausgewählten Sachthema verbunden, das einen besonderen Bezug zur gastgebenden Landeszentrale aufweist und zugleich eine intellektuelle Anregung für alle darstellt. Bei der Konferenz in Potsdam 1998 war es „Geschichtsbewusstsein in Ostdeutschland“. Namhafte Wissenschaftler der Universität Potsdam referierten dazu.

## 7.2. Fachkonferenzen

Wichtige Anregungen gehen von Fachkonferenzen bestimmter Disziplinen der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aus. Auf die längste Tradition können die *Fachkonferenzen* „*Publikationen*“ zurückblicken. Als 1991/1992 die Landeszentralen der neuen Länder hinzukamen, konnten auch sie von der etablierten Form des Meinungsaustauschs und der Koordination profitieren, brachten aber bald eigene Gedanken und Initiativen ein. Die Landeszentrale war inzwischen dreimal Gastgeber dieser Konferenzen.

Auf den Fachkonferenzen „Publikationen“ berichten die Publikationsreferenten über die Erfahrungen mit ihrem Medium. Sie benennen Probleme, die nicht selten länderübergreifenden Charakter haben, und beraten über ihre Erfahrungen bei der Problemlösung. Dauerthemen sind der Umgang mit den permanenten Mittelschrumpfung, von denen die meisten Landeszentralen betroffen sind, und seit einigen Jahren auch die Erhebung von Gebühren unter den jeweiligen Landesbedingungen.

Im Mittelpunkt dieser Fachkonferenzen steht der Meinungsaustausch über die Entwicklung auf dem Buchmarkt und über einzelne Publikationen. Von der Konferenz gehen Impulse für die Entstehung von Büchern aus, deren Themen für die politische Bildung von besonderer Bedeutung sind. Den Autoren werden Hinweise gegeben, um die Anliegen politischer Bildung zu sichern. Typisch dafür war der Grundgesetz-Kommentar von Hesselberger, der zum Standard-Angebot nahezu aller Landeszentralen gehörte, wie auch heute nach dem Tod des Autors der „Bürgerkommentar zum Grundgesetz“. Die auf der Konferenz vereinbarten gemeinsamen Buchankäufe führen zu erheblichen Mengenrabatten, die Mittel für zusätzliche Beschaffungen freisetzen.

Schließlich stellen die Zentralen allgemein interessierende Eigenpublikationen vor, um die Kollegen für Mitdrucke zu interessieren. Häufig sind dies Bücher der Bundeszentrale, auch Publikationen finanzstarker Zentralen wie der Bayerischen.

Wie bei der „Kleinen Geschichte der DDR“ darf auch bei den Mitdrucken Brandenburg für sich in Anspruch nehmen, einen der erfolgreichsten Titel eingebracht zu haben. Die von der Landeszentrale herausgegebene Broschüre „Jüdische Kultur und Geschichte“ von Ortag wurde von fast allen Zentralen mitgedruckt und findet nach mehreren Auflagen immer wieder das Interesse der Kollegen.

Seit mehr als einem Jahrzehnt gibt es eine weitere gewichtige Fachkonferenz, die mit der Entwicklung der neuen Medien kontinuierlich an Bedeutung gewann. 1999 beschlossen die Leiter der Zentralen die Bildung der Bundesarbeitsgemeinschaft „*Politische Bildung online*“. Auf deren Jahrestagungen werten die Spezialisten der Zentralen ihre einschlägigen Erfahrungen aus, empfangen und geben Impulse. Neben den Jahrestagungen finden Workshops zu speziellen Themen statt. Ein solches Thema war beispielsweise „e-learning“ mit den Schwerpunkten Globalisierung und Kommunalpolitik, ein anderes behandelte

Urheberrechte. Aus dieser Kooperation der Zentralen entstand als Gemeinschaftsleistung die homepage „politische-bildung.de“, ein kontinuierlich ausgebautes Informationsportal, von dem aus die Angebote der Landeszentralen und der Bundeszentrale erreichbar sind.

### 7.3 Gemeinsame Publikationen der 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Zu einem „Markenzeichen“ der Fachkonferenz Publikationen sind die von den Zentralen in gemeinsamer Initiative erarbeiteten und von einzelnen Publikationsreferenten herausgegebenen gemeinsamen Publikationen. Sie behandeln bestimmte inhaltliche Schwerpunktthemen, die nach einer übergreifenden Abhandlung unter der Spezifik jedes einzelnen Bundeslandes dargestellt sind. Der größte Teil der landesspezifischen Aufsätze stammt aus der Feder des Publikationsreferenten aus dem jeweiligen Land.

Seit dem Jahr 2000 entstanden inzwischen vier solcher Gemeinschaftspublikationen. Auf „Die deutschen Länder. Geschichte, Politik, Wirtschaft“ folgten „Kommunalpolitik in den deutschen Ländern“, „Direkte Demokratie in den deutschen Ländern“ und schließlich „Geschichte der deutschen Länder“, letztere von den Publikationsreferenten der Länder Brandenburg und Sachsen herausgegeben.

Dieser Beitrag sollte einen Einblick in die ersten zehn Jahre der Arbeit der Landeszentrale geben. In den 2000er Jahren wurde das Konzept der Landeszentrale weiterentwickelt. Sich schnell verändernde Bedingungen in Gesellschaft, Wirtschaft und Politik verlangten nach neuen Formaten und neuen Kommunikationsformen in der politischen Bildung. Auf diese Herausforderungen antwortete die Landeszentrale u.a. mit dem Ausbau des Internetangebotes. Gleichzeitig wurden immer mehr aktuelle, informative und auf den Dialog mit dem Publikum orientierte Veranstaltungen organisiert, die großen theoretischen Konferenzen spielten eine immer geringere Rolle. Beratung, Zusammenarbeit und Förderung der freien Träger der politischen Bildung rückte immer mehr in den Vordergrund. Die Idee dahinter: Im Flächenland Brandenburg gelingt es den freien Trägern vor Ort besser, auf die Bedürfnisse und Interessen der Menschen und die gesellschaftlichen Anforderungen einzugehen. So werden Partizipation und gesellschaftliches Engagement organisiert. Hierzu wird später zu berichten sein.